녹서 2025

모두의 질문을 담은 책 · Green Paper 2025

당신의 질문이 세상을 바꿀 때까지, 모두의 질문Q

정치 및 거버넌스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뽑고 해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회 및 복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정말 사라져야 할 존재일까요?

법과 윤리

범행 액수가 300억 이상인 경제 사범은 왜 모두 형을 살지 않지요?

교육과 입시 제도

우리 아이들은 언제까지 입시 전쟁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느린 학습자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정책은 없나요?

경제 및 산업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농협의 공적 기능이 작동하고 있나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도시 및 주거

청년들도 근로소득으로 집을 사는 세상, 만들 수 있을까요?
전세 사기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가요?

노동 및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과 차별을 해소할 대책은 뭔가요?
40대, 50대의 갑작스러운 퇴직 후 재취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족과 라이프스타일

오직 혈연관계만이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마땅한가?

문화 및 미디어

언론은 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건강과 의료

지방 및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이 심각한데 정부의 해결책은?

환경 및 기후변화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국제관계 및 외교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디지털 사회와 정보화

포털도 이제는 그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과학기술과 혁신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공동체와 신뢰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통일 및 국방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방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녹서
2025

세상의 모든 변화,
시민의 질문으로부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입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밑거름이 될 「녹서 2025(GREEN PAPER 2025)」가 오늘 세상에 처음 공개됩니다. 그 첫 페이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녹서 2025」가 태어나기까지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단지성을 응축하려는 이재명 당대표의 강한 의지와 박태웅 〈모두의 질문Q〉 대표, 김성환 의원과 송창욱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당직자로 구성된 사무국 실무진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서 뜨거운 성원과 참여로 함께해 주셨기에 모든 난관을 슬기롭게 넘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연구원을 대표해서 머리를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아인슈타인은 “나에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단 1시간이 주어지면 55분은 문제를 정의하고 나머지 5분은 문제를 푸는 데 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컨대 급속한 AI 기술혁신을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일자리를 앗아 가는 위협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서 정책 처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회적 과제를 제대로 풀려면 세상을 어떤 렌즈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주요한 정책 결정 이전에 그와 관련된 사회 전체의 질문을 엮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독일의 경우 노동 개혁을 앞두고 지난 2015년 「노동(Arbeiten) 4.0」이라는 제목의 녹서를 발간했고, 유럽연합 역시 문제 해결책 구상보다 필요한 질문을 모으는 제도적 노력을 우선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그동안 문제 자체에 대한 진단과 고민보다는 해결 방안을 찾는 일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비유하자면 몸의 치수도 재지 않고 옷부터 집어 들고, 몸을 이에 맞추려고 했던 셈입니다. 본말전도이자 말 앞에 수레를 놓는 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러한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도 충실하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녹서 2025」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이정표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이러한 과오에 대한 성찰 위에서 지난 2월부터 대국민 집단지성 프로젝트인 〈모두의 질문Q〉를 진행해 왔습니다. 일반 국민들부터 전문가, 협·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들을 모아 더 좋은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려 보기 위해서입니다. 두 달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7000여 건의 소중한 의견이 〈모두의 질문Q〉 플랫폼과 유튜브, 이메일 등에 답지됐습니다.

우리 민주연구원은 접수된 질문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긴 「녹서 2025」를 펴냈습니다. 시대정신부터 일상생활의 고민에 이르기까지 생생하고 날카로운 시민의 통찰력이 이 책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모두의 질문Q〉 참여를 통해 「녹서 2025」의 집필진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려 준 모든 국민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녹서 2025」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 100점짜리 해답을 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의 파고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세전쟁과 무역장벽에 수출 기반은 흔들리고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로 서민의 삶은 백척간두입니다. 편협한 진영외교는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로 쌓아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마저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본격화된 AI 혁명,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 초저출생도 우리에게는 벅찬 도전 과제입니다. 이처럼 사방이 위기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혹자는 대한민국이 흥망의 갈림길에 놓였다는 경고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별자리가 많으면 목적지를 찾기 쉬운 법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집단지성으로 빚어낸 「녹서 2025」가 비록 완벽한 정답지는 아닐지라도, 우리를 해답으로 안내할 훌륭한 이정표 역할을 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보다 많은 고민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한 사람의 질문이 모두의 질문이 될 때, 나아가 시민이 묻고 시민이 그에 답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길도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 「녹서 2025」, 새로운 길을 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아울러 더 많은 질문과 더 많은 토론이 국민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펴내는 녹서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녹서 2025」가 우리 사회의 내일을 수놓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시민의 손으로 직접 뿌린 7000여 개에 달하는 질문의 씨앗이 아름드리나무로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새로운 고민을 덧대고 이어 가겠습니다. 다방면에 걸친 심층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물음표를 대한민국의 느낌표로 만들겠습니다.

국민들 곁에서 국민과 함께 살아 숨 쉬며 성장하고 진화할 「녹서 2025」, 오늘 힘차게 닻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6월 국민의 집단지성에 터 잡은 진정한 민주정부, '녹서 정부'의 탄생을 위해, 나아가 회복과 성장,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새 장을 여는 걸음을 앞으로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녹서 2025」 발간 첫날
민주연구원장 이한주

프롤로그 2

사람·민주주의 그리고 질문
01 질문의 시작 10
02 변화의 방향 14

모두의 질문 하이라이트
01 몰아보기 22
① 정치 및 거버넌스 26
② 사회 및 복지 44
③ 법과 윤리 58
④ 교육과 입시 제도 76
⑤ 경제 및 산업 96
⑥ 도시 및 주거 118
⑦ 노동 및 고용 132
⑧ 가족과 라이프스타일 146
⑨ 문화 및 미디어 160
⑩ 건강과 의료 174
⑪ 환경 및 기후변화 188
⑫ 국제관계 및 외교 198
⑬ 디지털 사회와 정보화 206
⑭ 과학기술과 혁신 218
⑮ 공동체와 신뢰 230
⑯ 통일 및 국방 242
02 오늘 필요한 질문 250
03 세상에 이런 질문 254

질문 2025
01 전문가 264
02 OPQR 374
03 질문Q레이터 444
04 협회 및 단체 I 484
05 협회 및 단체 II 608

모두의 질문 642

사람·민주주의
그리고 질문

질문의 시작: 묻는 사람들

우리는 왜 〈모두의 질문Q〉를 시작했는가?

우리는 왜 「녹서」를 만들고 싶었던 것일까요? 왜 모든 시민이 참가하는 '질문의 장'이 필요했습니까? 몇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당연하게도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낸 사람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요구지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기재부에 대한 예산 요구서 정보공개 소송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낸 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이 당연한 요구를 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야 했다는 것, 기재부가 거듭 소송을 되풀이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터무니없는 현실입니다. 법원 판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전부 공개하는 판결문은 우리나라 법원은 지금도 대부분 공개하지 않으며, 공개하더라도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합니다.

관리비를 낸 사람으로서 '관리비 사용 내역을 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질문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함께 묻고, 함께 해답을 찾기 위한 조건

두 번째 이유는 물론 집단지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자타 공인 세계 최고의 '집단지성의 나라'입니다. '국난 극복이 취미인 민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태안군 앞바다에 좌초한 유조선의 기름을, IMF 경제위기를, 국정 농단과 내란을 함께 이겨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유려하고 알아듣기 쉬웠던 탄핵 판결문에도 광장의 집단지성은 분명히 녹아들어 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지속적으로 커져 왔지만, 3000여 년 전부터 돌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지식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철에 관한 모든 지식은 대장장이가, 집 짓기에 관한 모든 지식은 목수가, 요리에 관한 모든 지식은 숙수가 가져갔습니다. 서로의 뇌를 연결해 쓰기로 하면서, 즉 집단지성이 팽창하면서 개별 인간의 뇌는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집단지성은 인류 지능 진화의 자연스런 도착지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열린 생태계'가 늘 이기기 때문입니다. 집단지성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며, 가치를 공유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가만히 있어라'는 열린 사회의 적들의 공통 만트라입니다.

다양성이 무너질 때, 자유가 제재당할 때, 가치를 공유하지 못할 때 생태계는 언제나 소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품종으로 재배되던 바나나는 20세기 초 파나마병이라는 곰팡이 질병이 유행하자 단번에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닫힌 생태계의 위험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오픈소스 운영 체제인 리눅스가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도 빼놓을 수 없지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가해, 서로의 질문을 듣고 답하며, 가치를 공유할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묻고 있는 것들

〈모두의 질문Q〉의 요청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질문을 들려주세요.” 이 요청에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가해, 마감일인 3월 31일까지 6000개가 넘는 질문을 올려 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당연하게도 ‘정치 및 거버넌스’ 분야의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는 전체의 18%를 차지했습니다. 시민들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발생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시민의 뜻을 어떻게 직접 반영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개선 등이 대표적인 화두였습니다. 과거사 청산과 역사 인식에 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독재 시대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의견이 종종 대두되었습니다. 전관예우,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공직자 재산 환수, 보수와 진보의 재정의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회 및 복지와 관련한 질문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분야의 질문은 전체의 14%를 차지합니다. 노동 환경과 권리, 불평등 심화, 저출산과 고령화, 소외계층 지원, 건강과 의료, 환경 및 안전과 관련한 질문들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이런 주제들을 제치고 정치와 거버넌스 분야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시민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질문이 나온 분야는 ‘법과 윤리’입니다. 11%를 차지했습니다. 시민들은 부정의와 불공정, 특히 법 집행의 형평성을 의심합니다. 사회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체계, 온라인을 통해 범람하는 혐오와 갈등, 공동체의식과 연대의 복원을 묻습니다. 교육과 입시(9%), 경제 및 산업(7%), 도시 및 주거(6%), 노동 및 고용(6%)이 그 뒤를 잇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말하자면 당대 우리 사회의 스냅숏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동료 시민들이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는지, 무엇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들었습니다. 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열린 생태계를 통해 질문을 들었으니, 이제 열린 생태계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 때입니다. 같이 질문들을 끌어안고 토론합시다. 세계 최고의 집단지성 국가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세계 최고의 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의 시간이 왔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존중과 배려를 담아 함께 논의합시다.

재미난 얘기 하나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집단지성에 관한 첫 번째 실험을 진행한 사람은 다윈의 사촌 프랜시스 골턴입니다. 그는 1906년 영국 플리머스의 가축 박람회에서 800여 명의 관객들에게 소를 한 마리 보여 주고 그 무게를 예측하게 했습니다. 골턴의 원래 의도는 집단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대중은 전문가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속셈이었지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전체 참가자가 추측한 무게의 평균은 실제 소의 무게와 1파운드(약 453그램)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골턴의 실험은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즐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모두의 질문Q〉 대표
박태웅

변화의 방향
: 변화의 한가운데, 새로운 방향을 묻다

중첩된 위기의 한가운데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친위 쿠데타로 발생한 민주주의 위기를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이겨 낸 것입니다. 만약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대한민국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민주주의만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항상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가 심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기술혁신에 놀랄 틈도 없이, 트럼프발 관세장벽이 수출길을 좁히고 있고 중국은 높아진 기술력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자영업이 무너지고 경제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상황도 위기를 심화시킵니다.

얼마 전 경상도 일대에서 일어난 초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은 기후 위기로 인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라고 합니다. 지구 온도 상승 폭의 마지노선인 1.5℃는 2024년 사실상 무너졌고, 매년 더 강해지는 산불·홍수·태풍·폭염은 인류 생존을 위협합니다. 기후 위기는 원인도 밝혀졌고 해법도 나와 있는데, 익숙한 경로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마치 끓는 냄비 속 개구리 같습니다.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는 경제, 교육, 일자리, 병역, 연금, 지방 소멸 등 사회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물도 외부 환경이 나빠지면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각자도생의 시대, 높은 집값, 불안정한 노동, 가부장적 문화가 잉태한 인구 위기는 사회구조적 종합 처방 전 없이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뒤로 미룰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남북 간 평화 위기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20세기의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한반도와 그 주변 환경은 냉·온탕을 들락거릴 뿐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대륙 국가인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섬나라처럼 살아야 할까요? 저는 아직 백두산 천지 구경을 못 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평양을 거쳐 백두산 여행을 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 꿈은 생전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2025년 6월 3일이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힙니다.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에 대해 질문하고 대리자인 대통령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국민과 함께 찾아 가야 합니다.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는 우리가 보고 배울 나라가 이제는 따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식민 시대와 전쟁을 겪은 이후 벼농사를 주력으로 삼았던 대한민국이 경공업을 시작하고, 제철소를 짓고, 자동차를 처음 만들 때까지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를 설계하고,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을 개발할 때부터는 가르침을 줄 만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마침내 '세계에서 제조업이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직접 설계하고 개척해야만 합니다.

우선 AI와 기후 관련 산업을 쌍두마차로 두고 혁신적 산업생태계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통 제조업에 AI와 로봇 기술을 결합하고, 벤처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전 산업별 생태계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세계가 인정하는 K-문화와 AI, 기후산업을 연계하여 혁신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G7을 넘어 G5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또한 탈탄소 녹색 문명 시대의 선두 국가가 될 것입니다.

기본 사회로의 전환

각자도생 사회에서 기본 사회로의 전환도 꼭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의 가치는 남녀노소,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본 사회에서는 신혼부부가 최소한 직장 인근의 공공주택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 고용·소득 보장으로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정년은 연장되고, 누구나 국민연금으로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교육·의료·일자리·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도 더 이상 선언적 구호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제2의 농지개혁도 필요합니다. 선진국 진입의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해방 후 농지개혁이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86%가 소작농이었던 대한민국은 80%가 자작농으로 바뀝니다. 평등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힘으로 교육을 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질 좋은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두터운 중산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고령화·소농화된 농촌에 청년들이 들어가 규모화·AI화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지를 개혁해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담을 민주주의

민주주의도 더 확대해야 합니다. 다시는 위헌적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검찰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7 공화국 헌법 개정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1987년, 제6 공화국 헌법이 개정된 이래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담지 못했던,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을 포함해야 하고, 기후 위기 등 문명 전환기의 가치도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구조도 대통령 4년 중임과 결선투표제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 과학이 밝힌 137억 년의 우주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46억 살 지구가 얼마나 기적 같은 행성인지 알게 됩니다. 38억 년의 생명 진화의 끝자락에 나타난 호모사피엔스 역시 기적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우리는 모두 소우주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변화의 방향은 소우주와 같은 대한국민들이 모두 대한민국 공동체, 넓게는 지구 공동체에서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모두의 질문Q〉 대표 질문Q레이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환

모두의 질문
하이라이트

모두의 질문
하이라이트

모두의 질문 하이라이트는 〈모두의 질문Q〉 웹사이트에 올라온 모든 질문들의 지형을 파악하는 코너입니다.

여기는 인포그래픽 '몰아보기', 각 분야별 상징적인 질문들을 모아 둔 '오늘 필요한 질문', 그리고 웃음과 통찰이 담긴 '세상에 이런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몰아보기'에서는 6000개 가량의 전체 질문을 17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했습니다. '오늘 필요한 질문'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떠올리는 보통 질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질문'은 '재미'있는 질문, '기발'한 질문, '공감'하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두의 질문 하이라이트에 소개된 질문에 공감하며 답을 찾고 싶어 할 것입니다.

몰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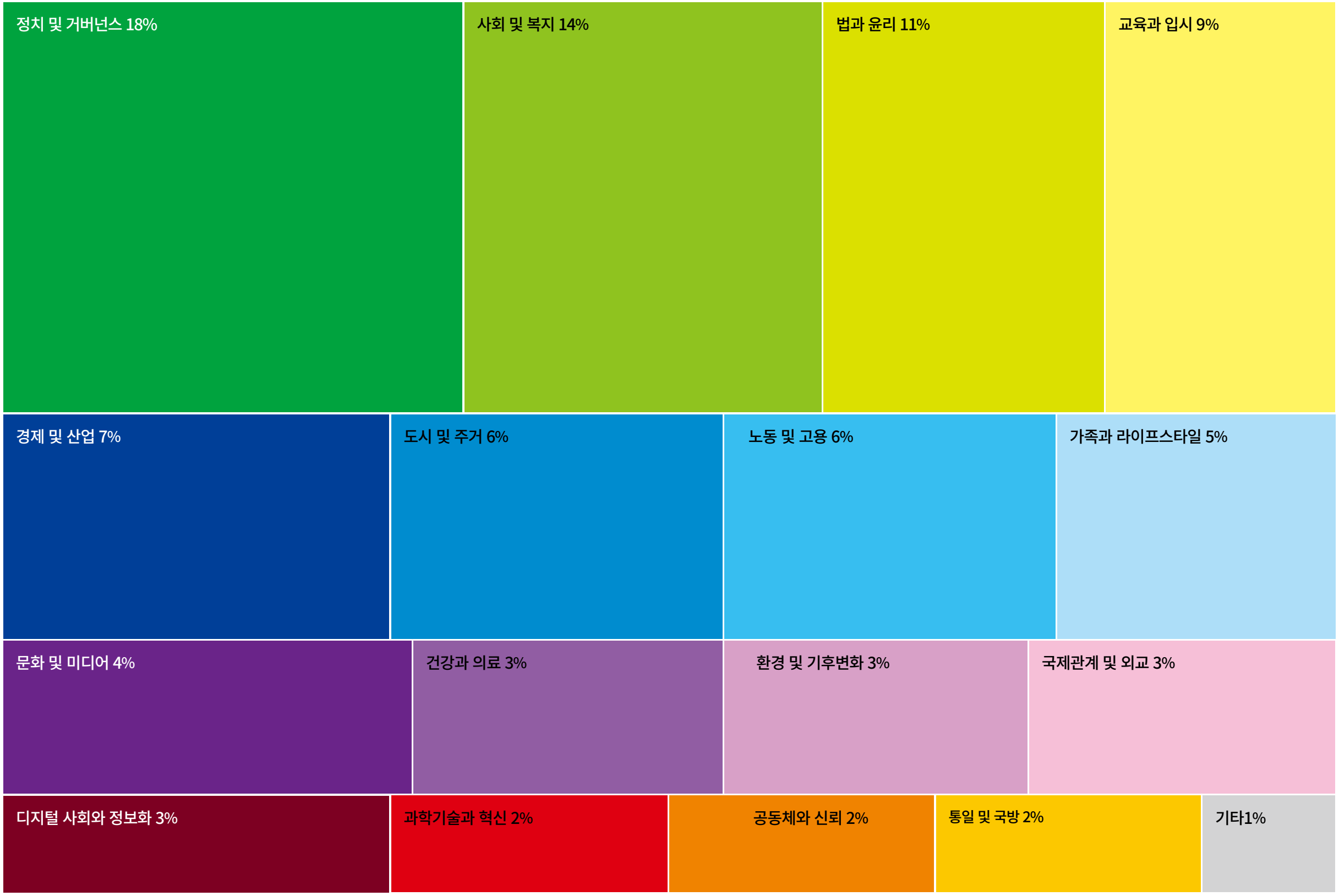
다양한 사회 영역을 가로지르는 시민들의 질문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마주한 핵심 과제를 또렷하게 비춰 줍니다. **정치 및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권력의 감시와 분산, 책임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합니다. **법과 윤리**에서는 부유한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해 가는, 사람에 따라 법이 달리 적용되는 현실에 대한 도덕적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 및 복지**, **노동 및 고용**, **도시 및 주거** 분야에서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전세 사기와 청년의 내 집 마련, 비정규직 차별 등 사회의 기저에 도저하게 흐르는 불안함이 집중적으로 제기됩니다.

교육과 입시에서는 입시 경쟁과 그에 따른 교육의 삶과의 치명적인 괴리, 느린 학습자에 대한 차별적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타나고, **경제 및 산업**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균형, 농협의 공공성 회복 등 경제정의를 향한 질문과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고민이 이어집니다. **가족과 라이프스타일**, **건강과 의료** 영역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의 공백, 혐오와 선동의 확산을 다룹니다. 포용과 신뢰의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문화 및 미디어에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의 신뢰 회복, **과학기술과 혁신**에서는 과학기술 인재의 탈출과 그에 따른 질적 저하, 인공지능의 인간 친화적 활용 방향, **디지털 사회와 정보화**에서는 포털과 디지털 플랫폼의 공공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펼쳐집니다. **환경 및 기후변화**에서는 갈수록 분명해지는 기후 위기 대응과 녹조로 대변되는 무능한 정책 대응,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재생에너지 정책, **공동체와 신뢰**에서는 세대 간의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국제관계 및 외교**와 **통일 및 국방**에서는 미중 갈등 속 자주 외교, 미래 안보전략을 묻는 질문들이 제기됩니다.

이처럼 16개 카테고리에 걸쳐 등장한 질문들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시민의 눈으로 묻고 또 설계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 질문은 곧 제안이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시작점이 됩니다.

대한민국 2025 몰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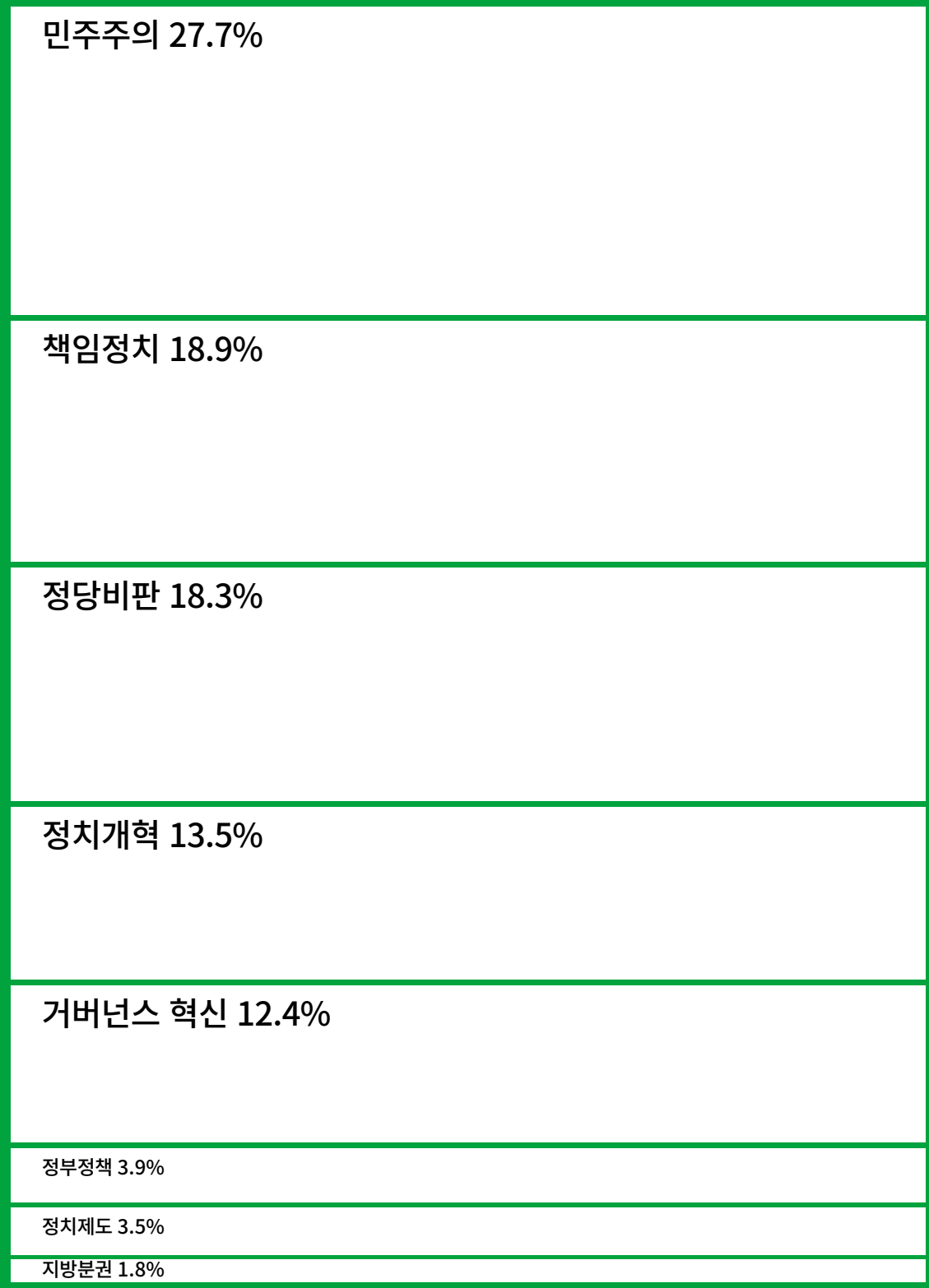


정치 및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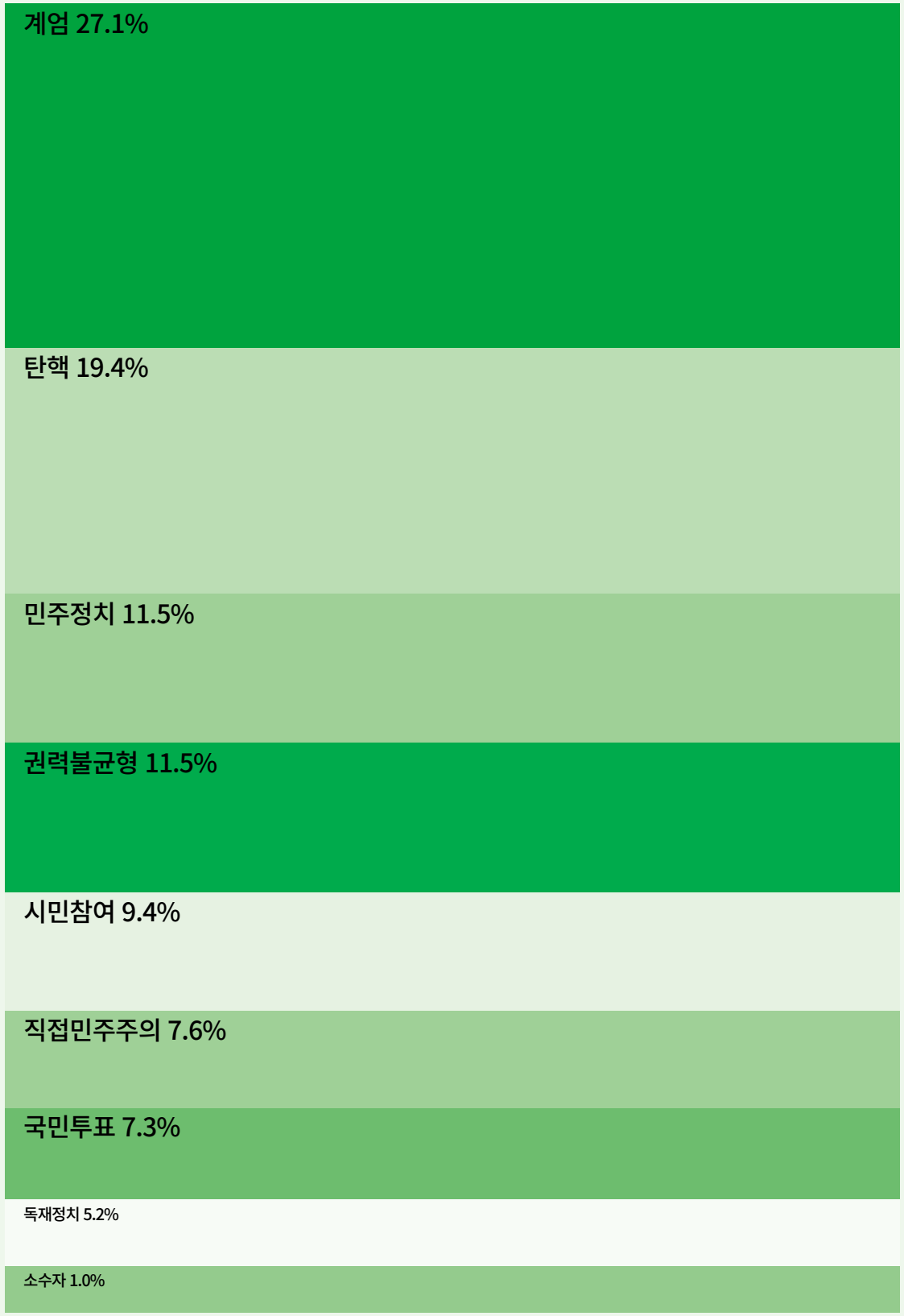
‘정치 및 거버넌스’ 분야의 질문들은 시민이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공공 권력이 민주적·윤리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는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을 보여 줍니다.

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탄핵, 직접민주주의, 국민투표 등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를 제도화하려는 고민부터, 국회의 책임성과 정치인의 윤리,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요구까지 폭넓은 관심이 나타납니다. 정치제도 측면에서는 개헌과 위헌 정당 해산,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제기되었으며,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행정 효율성과 정보 공개, 지방분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불만 제기를 넘어, 시민이 주도하는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심화를 향한 실천적 상상력과 제도적 대안의 모색을 보여 줍니다.



정치 및 거버넌스 질문 빈도 비율



민주주의 질문 빈도 비율

민주주의

'민주주의' 카테고리에 속한 질문들은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 구조를 요구합니다.

12.3 계엄 사태 관련 질문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의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며, 대통령 탄핵 관련 질문은 국민이 책임 정치에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합니다. 민주정치와 권력 불균형 항목에서는 권력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엘리트 중심 제도의 개선을 지적합니다. 시민 참여, 직접민주주의, 국민투표 관련 질문은 시민이 정치적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대를 제안합니다.

이 모든 질문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시민 모두가 존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계엄

- 불법 위헌 계엄과 내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자유민주적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전일웅)
- 군인들이 더 이상 정치 폭력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노은석)

탄핵

- 대통령 선출은 직선제인데 탄핵은 왜 국회의원만이 가능한가요? (차기수)
- 대통령이 선출한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게 맞는 건가요? 제척 사항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정진)

민주정치

- 대통령을 국민이 소환하는 제도는 왜 한국엔 없나요? (김보영)
- 권력을 대리받을 때는 구걸하다시피하면서, 왜 잘못했을 때 주권자가 해고도 못 시킨단 말입니까? (김경숙)
- 우리 대한민국은 왜 질문이 없는 사회인가? (권재진)

권력 불균형

-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제한해야 하는가? (윤근영)
- 입법부는 행정부의 시행령이나 사법부의 판결문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제도가 있나요? (최가라뫼)

시민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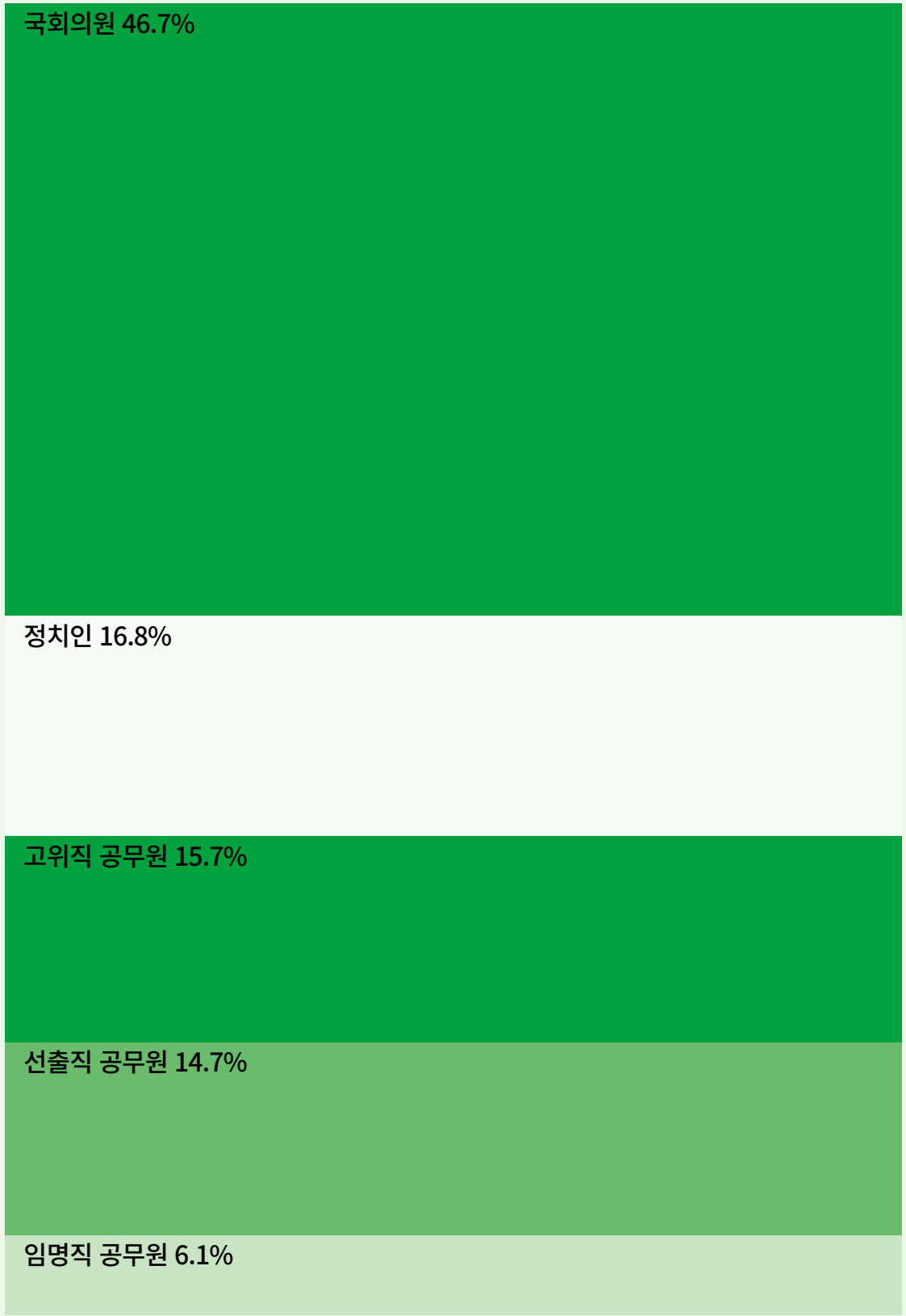
-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내부 기관, 국민이 탄핵을 청구하는 제도가 필요치 않나? (남궁호)
- 매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활성화하면 어떨까요? (윤진득)

직접민주주의

- 직접민주주의를 확고히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들은? (이정삼)
-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석남)

국민투표

- 3권분립의 수장을 투표로 뽑으면 안 되나요? (이성우)



책임정치 질문 빈도 비율

책임정치

'책임정치' 분야의 질문들은 선출직과 임명직 모두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국회의원 관련 질문은 비상식적 언행, 직무 유기, 다선의 폐해 등 자질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소환제나 임기 제한 등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제안합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사면, 병역 기피, 정책 실패 책임 회피 등이 정치 혐오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들을 요구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법 시 해임, 선거비용 환수 등 실질적 책임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임명직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자격 기준 명확화, 임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권한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른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 국회의원들의 비상식적인 막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요? (전성희)
- 수준 떨어지는 국회의원들 삼진아웃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필)
-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배치되면 현장 일일 체험을 반드시 했으면 합니다. (탁수신)
- 국회의원은 왜 평생 합니까 ? 정치인들도 정년을 만듭시다. (김지현)
- 국회의원도 3선에 제한을 둡시다. (정의철)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 가능할까요? (유병례)
- 국회의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투표 보이콧, 왜 불이익 없나요? (정명희)

정치인

- 대통령의 사면권은 이대로 좋은가요? (김선재)
- 정치를 혐오하도록 조장한 것은 누구입니까? (윤연정)
- 왜 정치인은 실패한 자신의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나요? (백영민)
- 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은 군대 안 가는 분들이 많습니까? (윤성원)

고위직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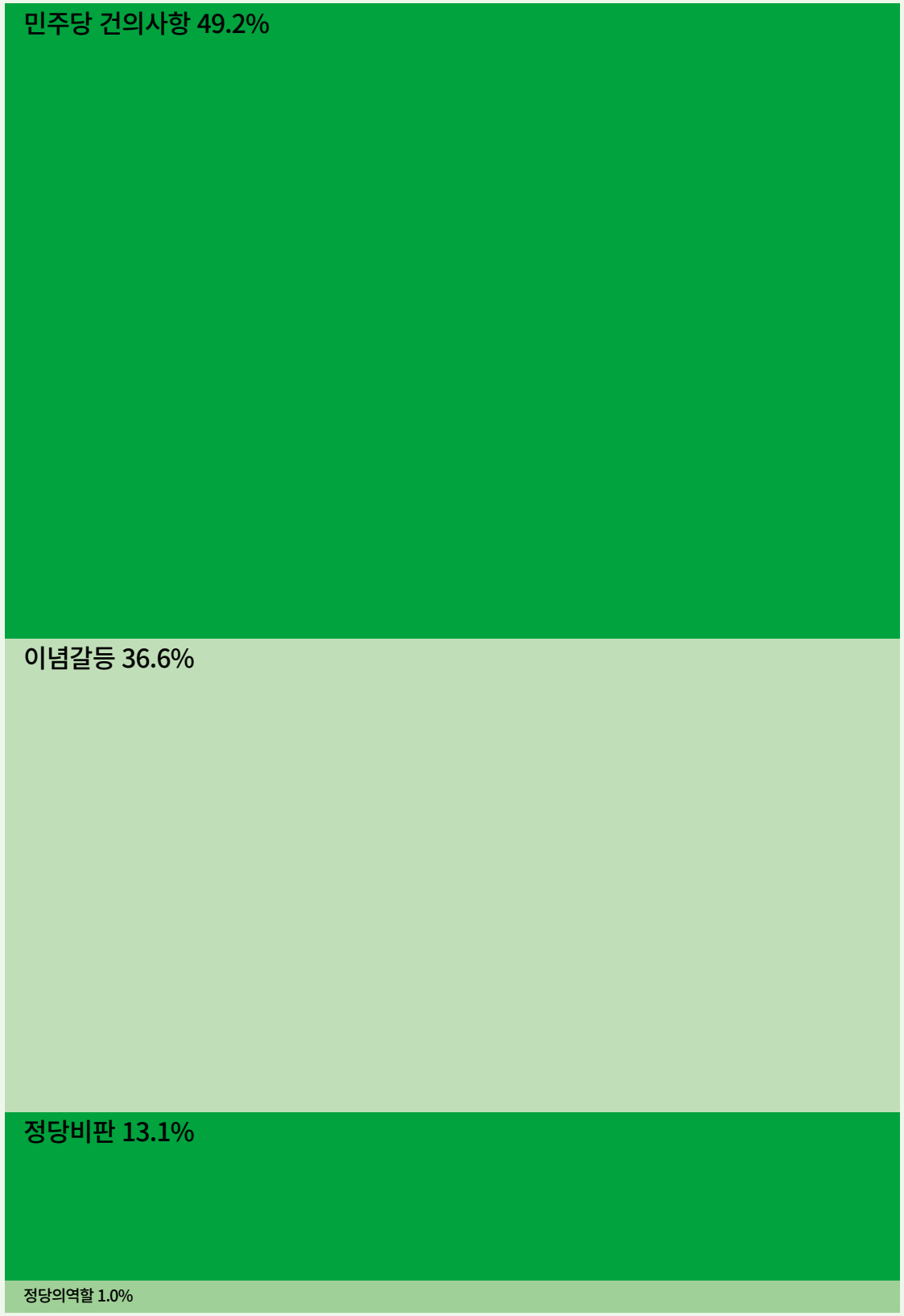
- 대통령 검찰총장등.. 고위 공직 수장들을 국민이 탄핵하면 안 되나요? (최영희)
- 대통령 및 고위직 평가 시스템(정기, 수시)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이경종)
- 지도층의 사회윤리, 도덕을 검증할 수 없을까요? (모사례)
- 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그 힘을 쓰는 길,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김경숙)

선출직 공무원

- 선출직의 해임에 왜 국민투표로 해임하는 절차는 없는가? (이은주)
- 선출직 공무원의 귀책사유(위법행위)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 선거비용을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왜 부담하게 하지 않을까? (김승도)
-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데 개선할 방법은? (강동건)

임명직 공무원

- 정부출연 장의 임명은 누가 해야 하는 걸까? (정성묵)
- 해당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가 장관을 맡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성제)



정당 비판 질문 빈도 비율

정당 비판

'정당 비판' 분야의 질문들은 정당이 민주주의의 중심 축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질문들은 특정 정당의 정책적 방향성과 리더십, 공공성과 유능함에 대한 기대를 담은 제안과 비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념 갈등 항목에서는 정치의 극단화를 우려하며 통합과 상생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당 비판 항목에서는 당비 사용의 투명성, 지역 정당의 부패 구조, 당원의 실질적 참여 부족 등 정당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정당이 권력 확보의 도구를 넘어, 국민을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실질적 플랫폼으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건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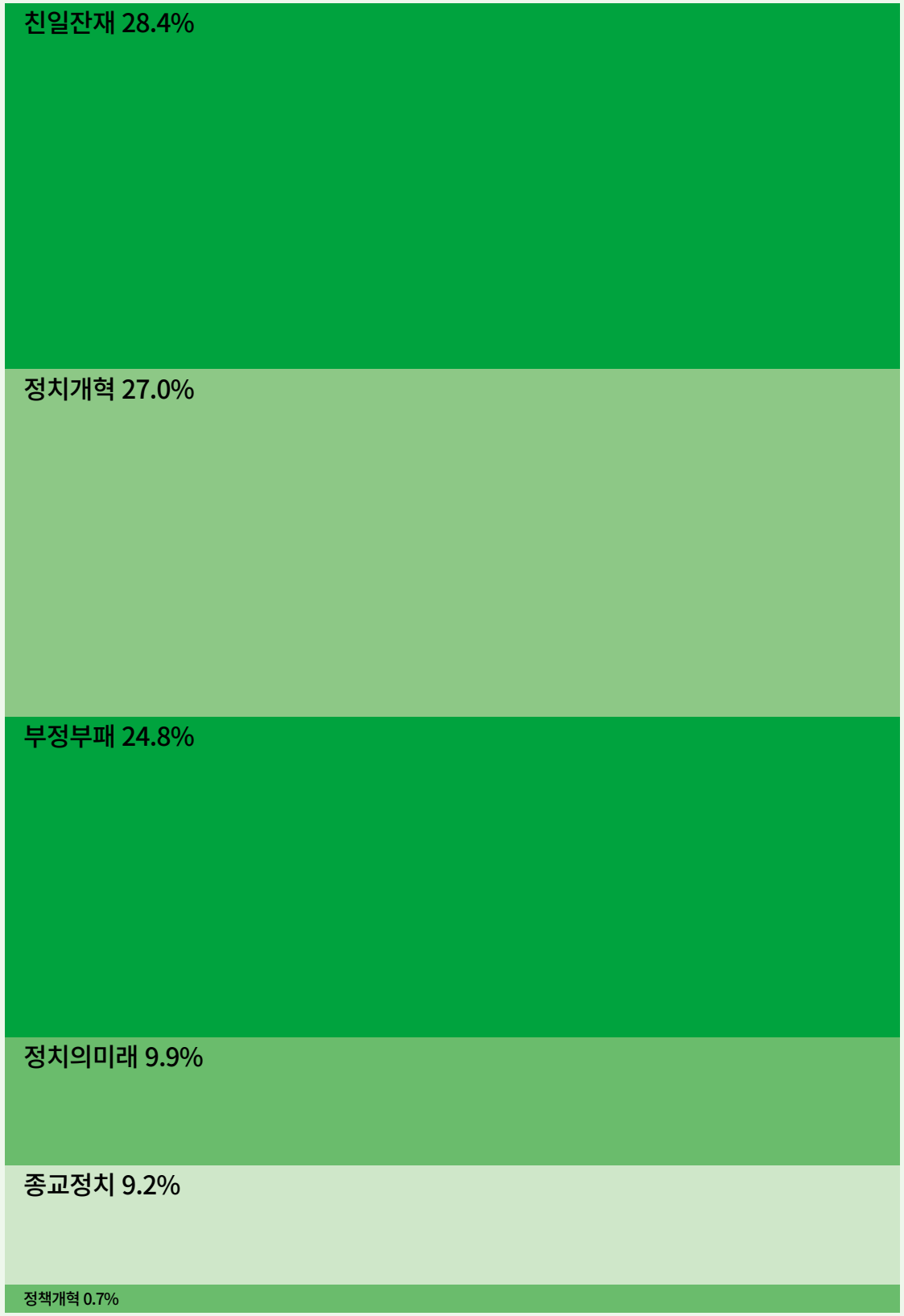
-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현재의 국정 난국 해법에 대해 어떤 구상이 있나요? (강대삼)
- 민주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함 아닐까요? (규희성)
- 더불어민주당은 표준이 되는 정당(pivot party)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웅)
- 민주당은 사회적 과제를 책임지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원남연)

이념 갈등

- 한국의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 극우화의 흐름을 멈출 수 있는가? (김은주)
- 과연 합치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성호)
- 지역적 이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지용)

정당 비판

- 왜 당비 납부는 매달 영수증처럼 알려 주면서 사용 내역은 안 보내 주나요? (정유경)
- 지역당 개혁이 필요하다. 풀뿌리가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썩어 가고 있다. (이대송)
- 당원의 역할은 뭔가요? 단순 동원 대상으로만 남아도 되나요? (배용한)



정치개혁 질문 빈도 비율

정치개혁

'정치개혁' 분야의 질문들은 과거의 청산에서부터 현재의 권력 감시, 미래의 정치 방향 설정까지, 한국 정치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질문들은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조치의 미비와 그에 따른 실패의 반복을 지적하며, 정치개혁 관련 질문들은 불신받는 정치 시스템과 정치인 양성 구조의 개선, 권력기관의 중립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항목에서는 지방정부와 공공부문의 카르텔, 전관예우, 불투명한 권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구조적 해결책을 요구하며, 정치의 미래 항목에서는 극단적 정파 대립을 넘어 책임 있는 보수 정치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고민이 드러납니다. 종교정치 관련 질문들은 정교분리 원칙의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정치가 과거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현재의 불신을 해소하며, 미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와 책임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일잔재

- 대한민국의 민족과 역사를 배신한 친일파 청산은 왜 이뤄지지 않나요? (박문혁)
- 미래세대가 친일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의필)
- 일제강점기 때 적극적으로 친일 매국 활동을 했던 자들에게 수여한 국가 훈장과 포장, 국립현충원 안장을 취소 및 회수할 수 없을까? (박성우)

정치개혁

- 우리는 왜 제대로 된 정치인을 육성하는 시스템을 가질 수 없는가? (노민호)
- 검찰과 경찰이 정치적 편파성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힘을 사용하려면? (조경호)
-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 등을 저질렀을 때 수사기관과 권력 승계 순위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수아)

부정부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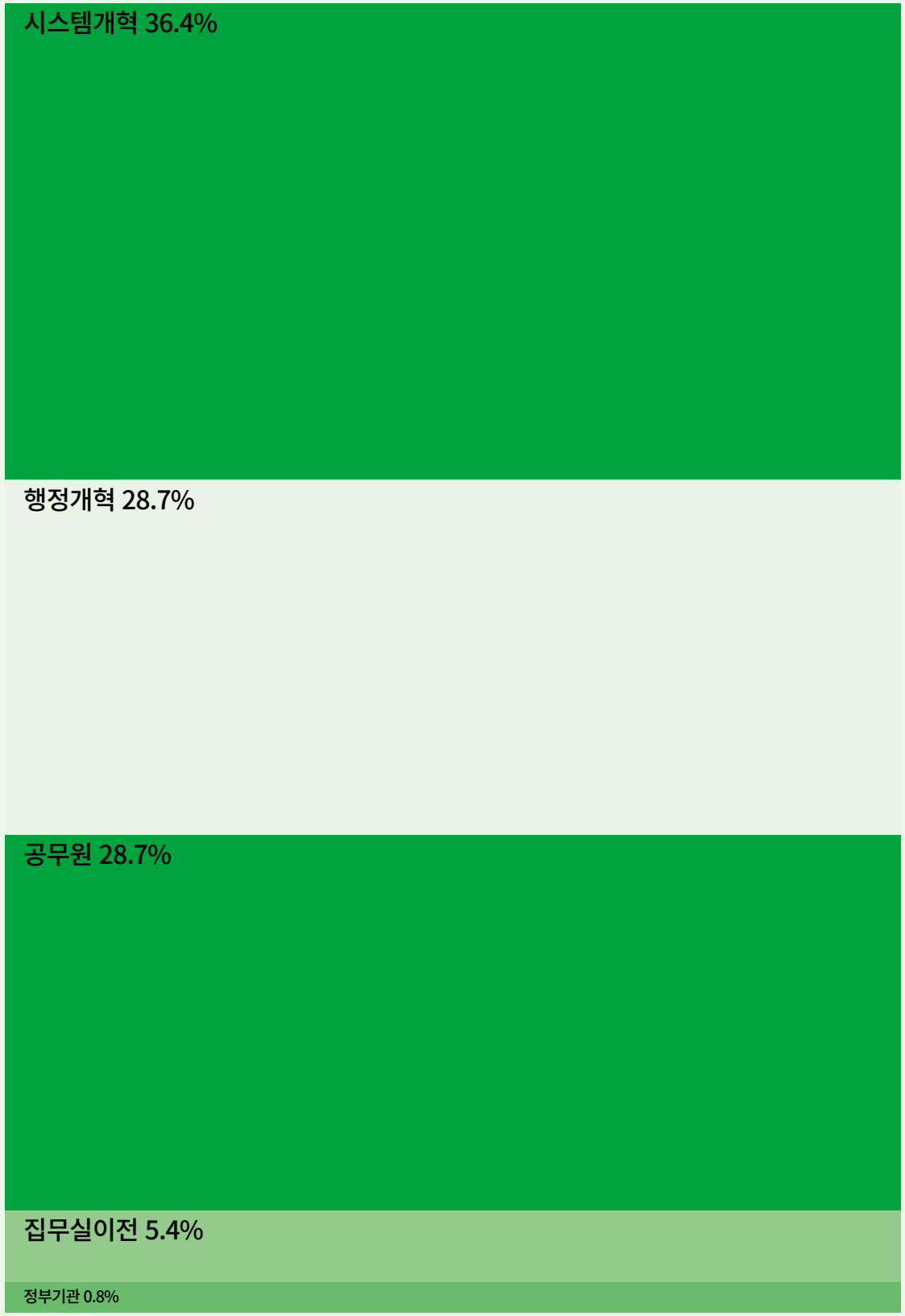
- 엘리트 카르텔, 부정부패로 돈 번 자들, 재산환수법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박선진)
- 왜 전관예우를 두고 보고 있는가? (배상철)
- 공공부문의 카르텔은 부패와 부조리의 원천이다. 없앨 수 없을까? (이대송)

정치의 미래

- 우리나라 정치가 극단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김동환)
- 현 시대에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박진표)

종교정치

- 권력과 종교를 분리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위진한)
- 종교가 정치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김지수)



거버넌스 혁신 질문 빈도 비율

거버넌스 혁신

'거버넌스 혁신' 분야의 질문들에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쿠데타"가 일어난 데 대한 놀라움과, "무너지지 않는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싶은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산 운용과 정책 연속성 같은 행정 관행 개선, 공무원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정당성과 비용 문제,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부 조직의 역할 강화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정부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일관성, 그리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혁

- 무너지지 않는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김봉학)
-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쿠데타가 우리나라에서 왜 일어났을까요? (임동민)
- 대통령 중임제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윤지석)
- 정부 정책이나 지원 내용들을 한곳에서 찾을 수 없을까요? (정미진)
- 새 정부에선 정부의 구조와 시스템 프로세스를 바꿔야 합니다! (송인아)

행정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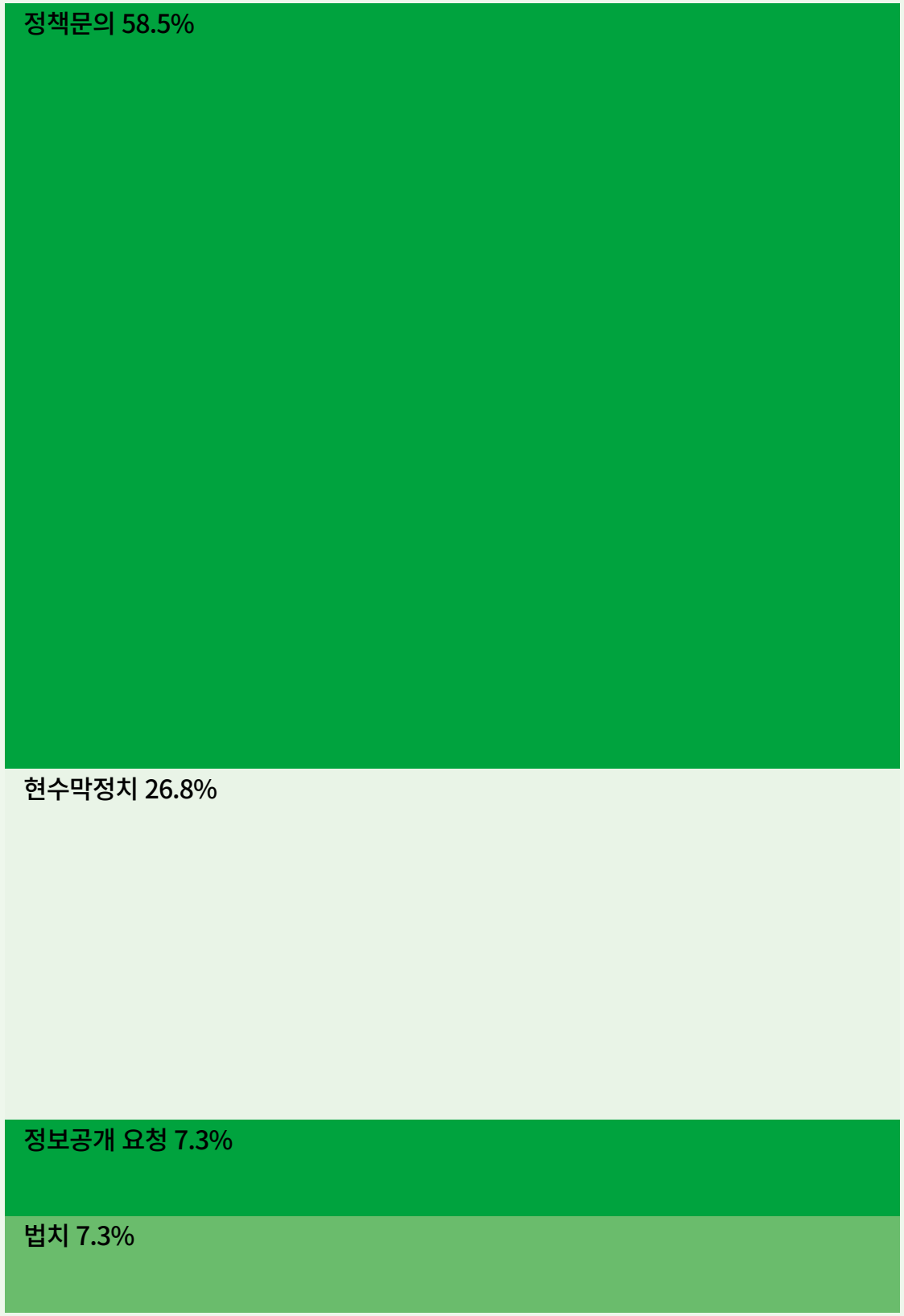
- 공공기관들은 당해 연도 예산을 왜 꼭 무리해서 소모해야 하나요? (지재용)
- 왜 지역구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스템이 다를까요? (예 : 폭설) (김영민)
- 정부 부처와 기타 공공기관 인사·행정, 제대로 관리감독은 되고 있나요? (홍순근)
- 좋은 정책도 연속성 없으면 국민 피해… 시행 기간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윤명희)

공무원

- 공무원 순환보직, 지금 같은 전문성 중시 사회에 안 맞지 않나요? (이정훈)
- 공직자들은 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할까요? (김남국)
- 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가? (노정호)

집무실 이전

- 대통령실을 대통령 마음대로 옮겨도 되나요? (장규홍)
- 대통령 관저 이동으로 인한 비용을 국민이 책임지는 것이 맞나요? (이명희)



정부 정책 질문 빈도 비율

정부 정책

'정부 정책' 분야의 질문들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의 실효성과 공공성, 그리고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 문의 항목에서는 국민 참여 확대, 국민신문고의 개선 등 일상적 불편 해소와 제도적 개선에 대한 제안을 제기합니다. '현수막 정치'에 대한 질문들은 시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정당의 정치문화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 항목은 정부의 예산 집행과 행정 정보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정부정책이 국민과 더욱 가까이 연결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성찰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책 문의

-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이형석)
- 공공기관 규모 및 인사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대송)
- 공직자들의 인사 자격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김세진)
- 정책과 법안의 유통기한은 왜 없나요? (황대용)
- 〈국민신문고〉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천석)
- 외무고시를 다시 부활하면 안 될까요? (김용만)
- 청와대를 복구할 수 없나요? (박동혁)

현수막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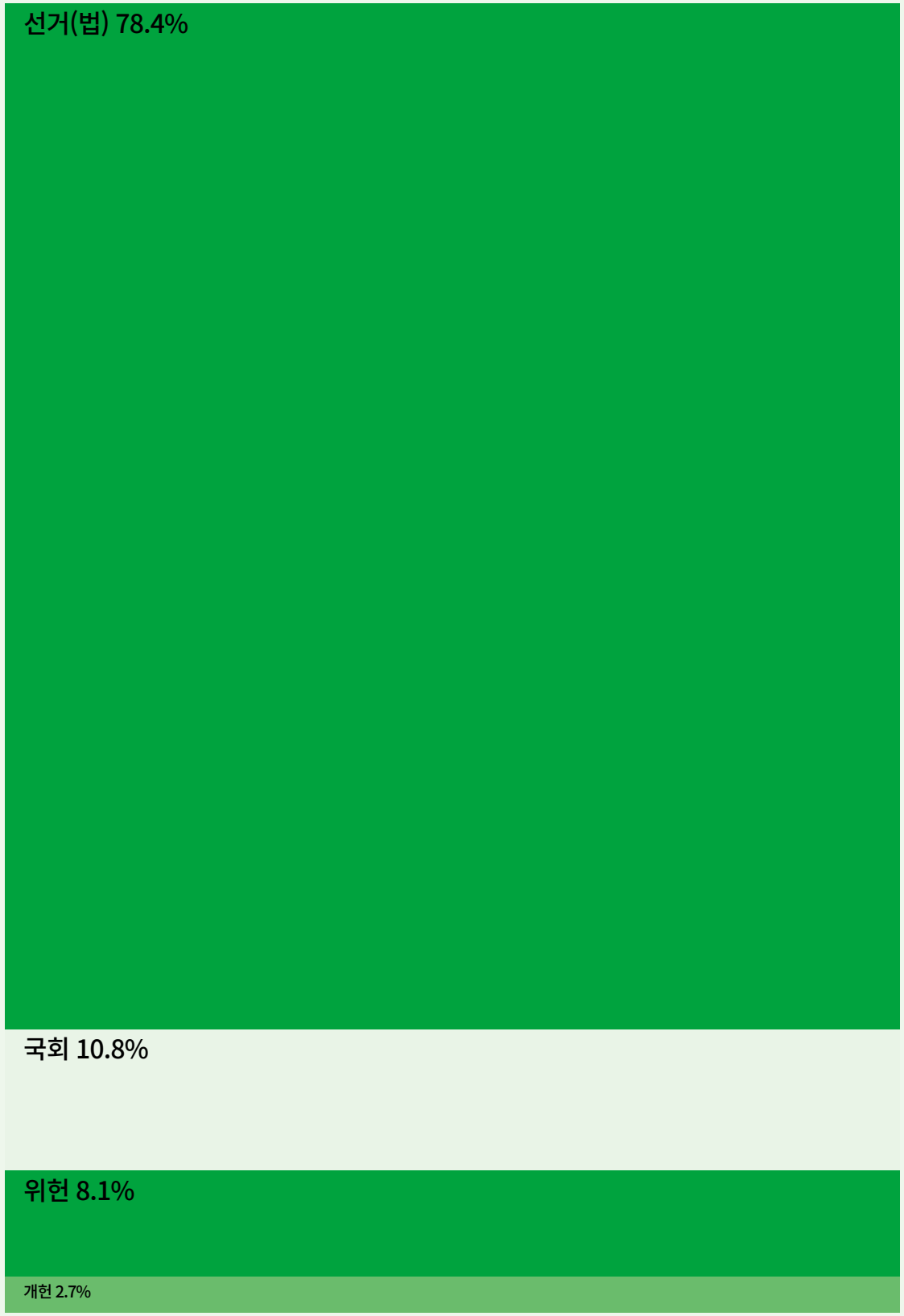
- 정당 현수막의 문구는 왜 제재할 조치가 없는 건가요? (강수연)
- 왜 서로 다른 정당 및 사람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막을 수 없나요? (정일형)
- 정치 현수막 게시로 인한 고통을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요? (문정례)
- 플래카드, 그만 겁시다. 대표적인 세금 낭비입니다. (임강빈)
- 정치 현수막의 비용을 공개해 주세요. (박해얼)

정보공개 요청

- 각 정부 부처에서 매년 요구하는 예산 내역은 객관적인가? (황의홍)
- 정부 홈페이지의 거짓 자료, 왜 고쳐지지 않을까요? (홍석환)

법치

- 강력한 처벌과 재산 몰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원흥)



정치 제도 질문 빈도 비율

정치 제도

'정치제도' 분야의 질문들은 선거제도, 입법기관의 책임, 헌법 질서 수호, 그리고 개헌 논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적 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자각은 정치 및 거버넌스 전반을 관통합니다. "위헌 정당 해산은 국민이 할 수 있어야" 하고,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지 묻습니다. 선거(법) 항목에서는 후보 검증, 선거비용, 투표권 연령, 온라인 투표 등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고, 국회 관련 질문에서는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보다 책임 있는 개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정치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참여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시민적 열망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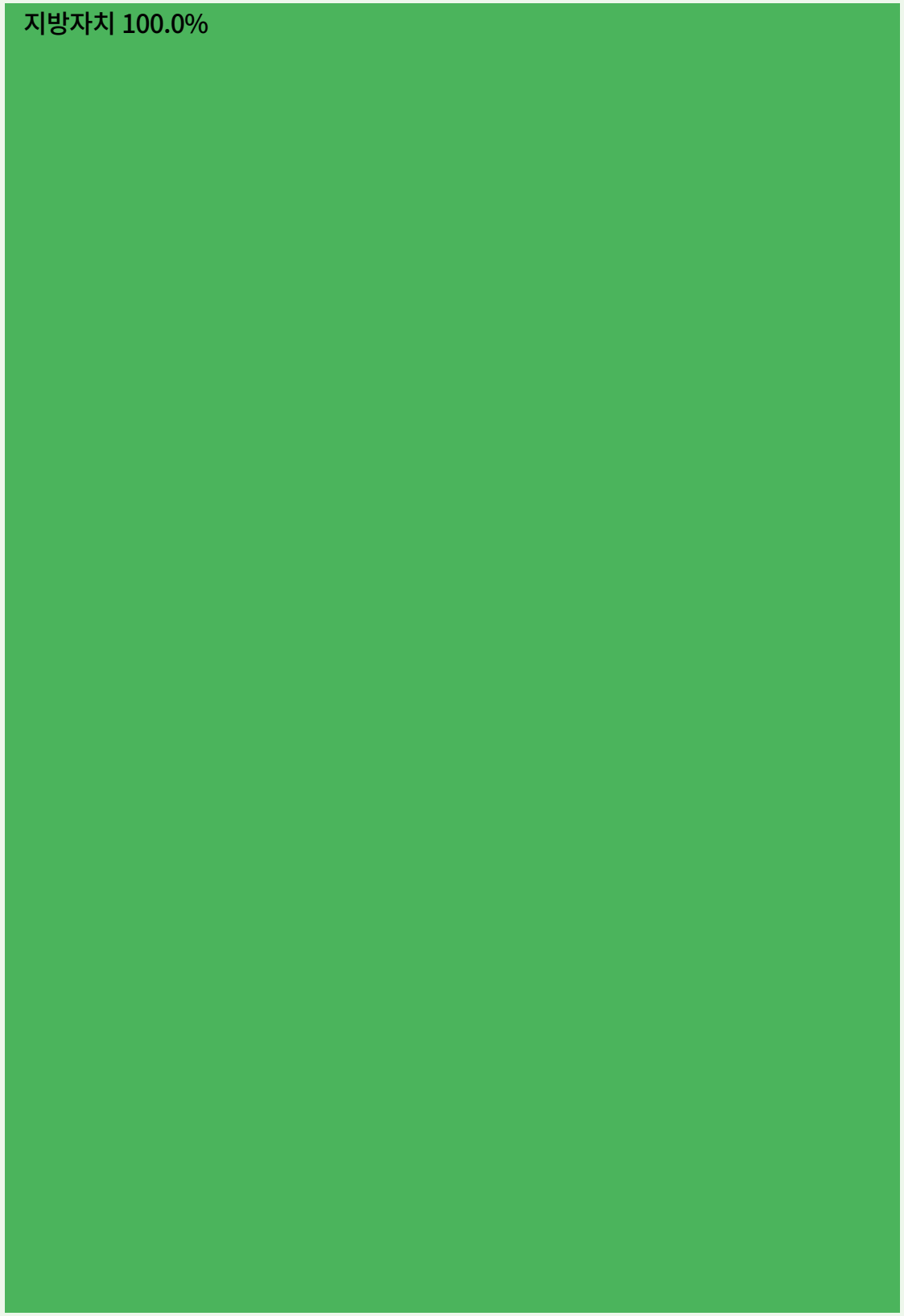
- 지방선거는 왜 시장, 도지사, 군수 등을 견제해야 하는 의원들과 같이 선출하나요? (박준규)
- 대통령 선거전 후보 검증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오기석)
-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요? (정원일)
- 다수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 완전한 방식인가요? (차기수)
- 현행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는 문제점이 없나요? (조세현)
- 연령에 의한 선거권(투표권) 취득은 과연 합리적인가? (권경훈)
-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김미애)
- 전 국민 모바일투표제를 모든 선거와 여론조사에 왜 전면 실시하지 않나요? (이우혁)
- 3부 요인들을 모두 직선제 투표로 뽑는 건 왜 안 될까요? (노승현)
- 위헌 정당 해산은 국민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공은주)

국회

- 헌재의 결정이 어떠하든 헌재의 시간이 끝나면 마지막 남은 질서와 시스템은 국회입니다. 더 단단한 각오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태진)
- 국회는 당을 해체해야 합니다. (이영준)

위헌

- 반헌법 세력이 힘을 키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승엽)
- 위헌 정당 해산은 국민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공은주)



지방분권 질문 빈도 비율

지방분권

‘지방분권’ 분야의 질문들은 지방자치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지역 민주주의의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치인의 자질 검증과 평가 시스템, 토호 세력과 결탁한 지방정부와 의회의 견제받지 않는 부정부패 구조, 지방자치제의 부작용에 대한 중간 점검, 수도권과의 조건 격차 속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지방이 더 나은 자율성과 민주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방자치

-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지방 정치인들을 평가하고 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김영준)
- 지방자치제의 부정적 요소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중간평가를 내리고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황숙)
-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지방이 수도권보다 더 어려운 조건입니다. 지방에서 사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지방에서 민주주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신명진)
- 지방정부·지방의회의 부정부패를 어떻게 하면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박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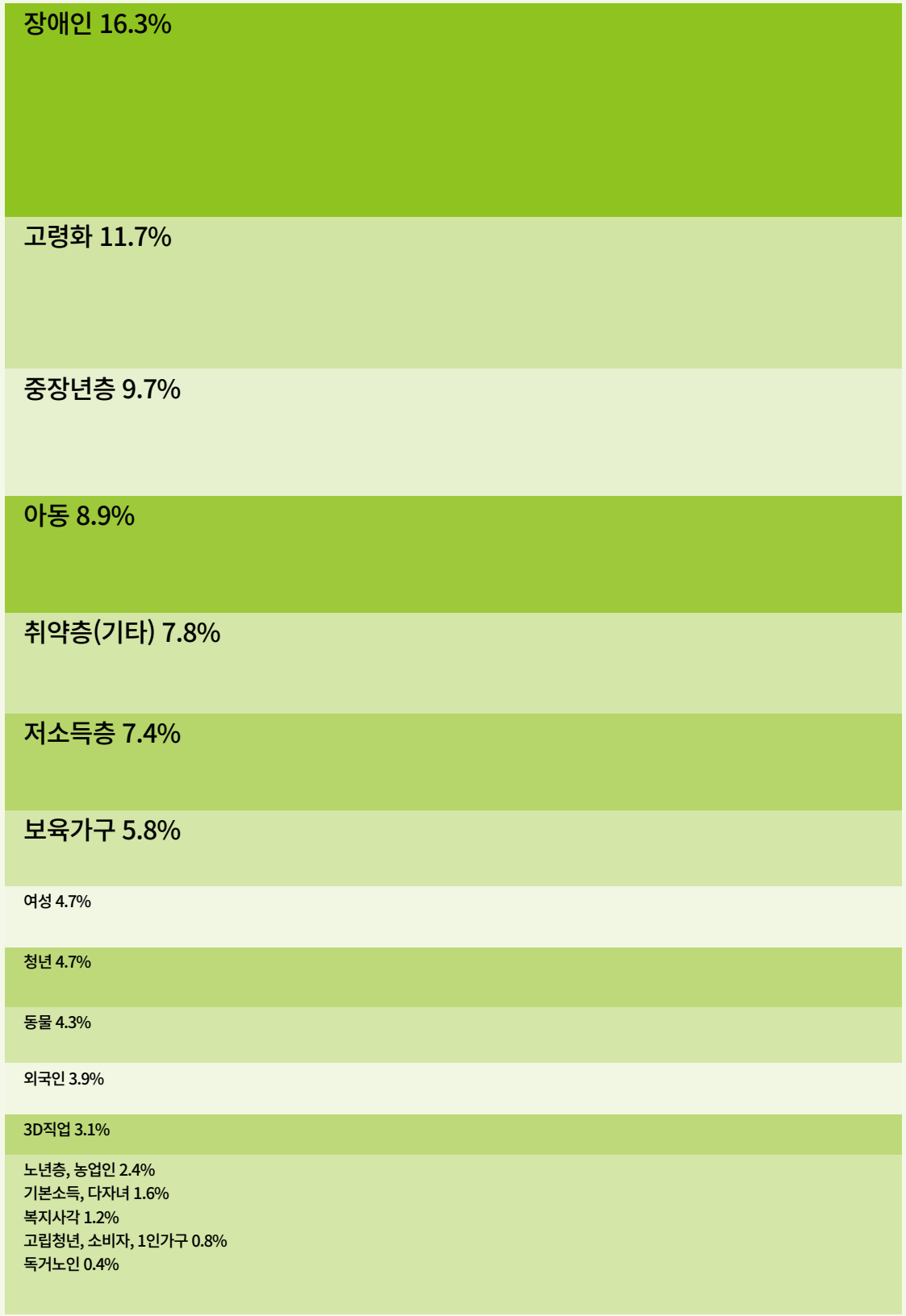
사회 및 복지

‘사회 및 복지’ 분야의 질문들은 단순한 복지 수혜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 구조와 공존의 방식, 그리고 신뢰의 회복까지 폭넓게 포괄합니다.

장애인, 노년층, 여성, 청년, 1인가구 등 다양한 삶의 조건을 포용하는 복지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에 대한 요구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존의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복지제도에 대한 질문은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행정 효율성을 중심으로 제기되며, 국민연금·기초연금·세금 구조·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로 떠오릅니다. 한편 사회 양극화, 사회 신뢰, 재난관리 카테고리에서는 혐오, 불공정, 낙인, 경쟁, 실패, 자살, 범죄, 안전불감증 등 구조적 문제들이 제기되며, 이는 ‘복지’가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 신뢰와 존엄을 회복하는 공동체적 장치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국민 권익과 사회규범 카테고리에서는 정책의 실효성과 접근성, 사회문화적 인식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존중받고 자유롭게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복지’를 생존의 문제이자 공존의 기술로 인식하는 이 질문들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구조적 상상력과 실질적 제도 혁신을 요구하는 시민의 집단적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및 복지 빈도 비율



복지수혜자 질문 빈도 비율

복지수혜자

'복지수혜자' 분야의 질문들은 한국 사회의 복지 체계가 다양한 삶의 조건과 생애 주기를 얼마나 포용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년층, 아동, 여성, 청년, 1인가구,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복지 대상자들은 생존의 기본 조건부터 일상 속 불평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도 절실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 공백, 저소득 가정의 교육 기회, 고립된 청년과 독거노인의 삶, 다문화와 외국인 통합, 3D 직종 종사자의 처우 등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회적 존엄과 동등한 시민권을 위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함을 드러냅니다. 한편 기본소득, 농민 소득보장, 복지 기준 개선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제도의 경직성과 관행 중심의 정책 설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보편과 선별, 공감과 정의 사이에서 보다 섬세하고 실질적인 복지 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이자, 한국 복지의 미래를 향한 방향 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 내가 떠난 뒤, 중증지적장애 가진 내 아이도 존엄하게 살 수 있을까요? (방수진)
- 어떻게 하면 발달장애인도 함께 동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김건우)
- 거동이 불편하신 엄마와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걸까요? (진영수)
- 선천성 질병으로 구직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현숙)

고령화

- 노인 빈곤, 노인복지, 노인 고용에 대해 충분한 고민과 대비를 하고 있는가? (김주원)
- 최소한의 걱정 없는 노후, 정말 개인 책임만으로 돌려도 되나요? (박재민)

중장년층

- 청년·노인 정책은 넘쳐 나는데 왜 4050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까? (신일섭)
- 이 나라엔 왜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은 없습니까? (박미주)
- 정년 이후 노령연금 받기 전의 소득 공백, 그동안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김희옥)

아동

- 인구가 줄고 있다는데, 왜 여전히 고아 수출은 세계 최고 수준인가요? (전상훈)
- OECD 국가 중 가장 불행한 한국 아동이 마음껏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놀며 성장하려면 개인, 가정, 사회, 정부 및 비정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최재훈)

취약층(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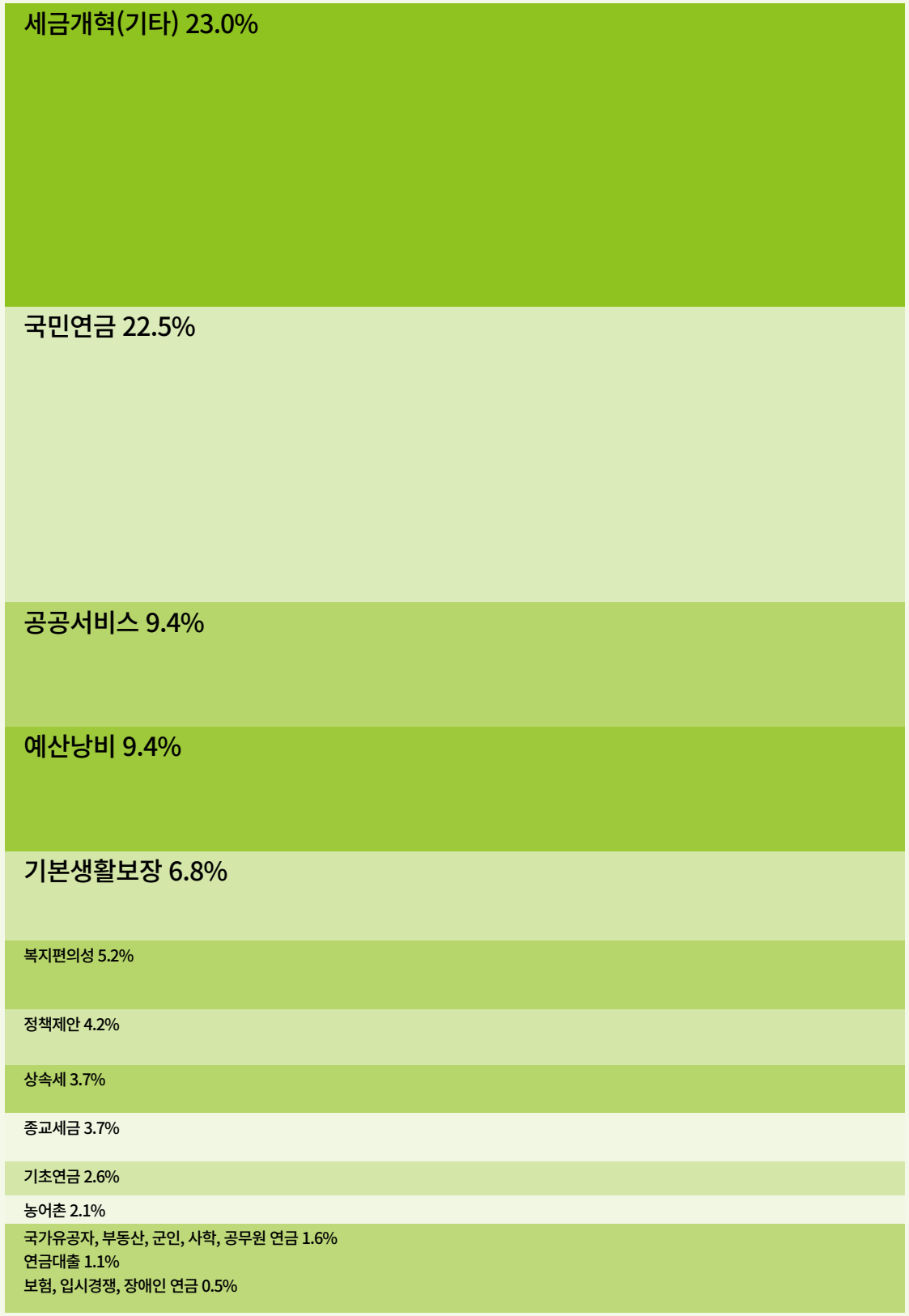
- 사회 구성원을 위한 기초 안전망은 무엇입니까? (박상진)
- 왜 최하위 계층에게 효과 있는 직접적인 복지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나요? (김태희)

저소득층

- 근로를 포기하고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김미선)
-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할 수 없나요? (이성욱)

보육 가구

- 왜 취학 전 아동한테만 양육 수당을 줄까요? (장혜진)



복지제도 질문 빈도 비율

복지제도

'복지제도' 분야의 질문들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복지 정책의 공정성, 효율성,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는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세금 개혁과 예산 낭비 문제,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 문제 등은 복지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재설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국가유공자·장애인·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와, 생애주기·생활환경에 따른 자동화된 복지 접근의 필요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정 개편 등 실질적 편의성과 포용성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입시경쟁 완화, 보험 이용의 불편함, 상속세 개편, 종교 세금 부과 등 시민 삶에 직결된 다양한 쟁점들은 복지 제도의 형평성과 공공 신뢰 회복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복지를 단순한 '혜택'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금개혁(기타)

- 연말만 되면 소비되는 혈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윤송희)
- 종교와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장경수)
- 내가 내는 세금은 어디로 가나요? (황명복)

국민연금

- 국민연금을 최대 수익률이 나오도록 해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법은? (최익수)
- 연금개혁, 왜 미래세대만 희생해야 하는가? (정윤범)

공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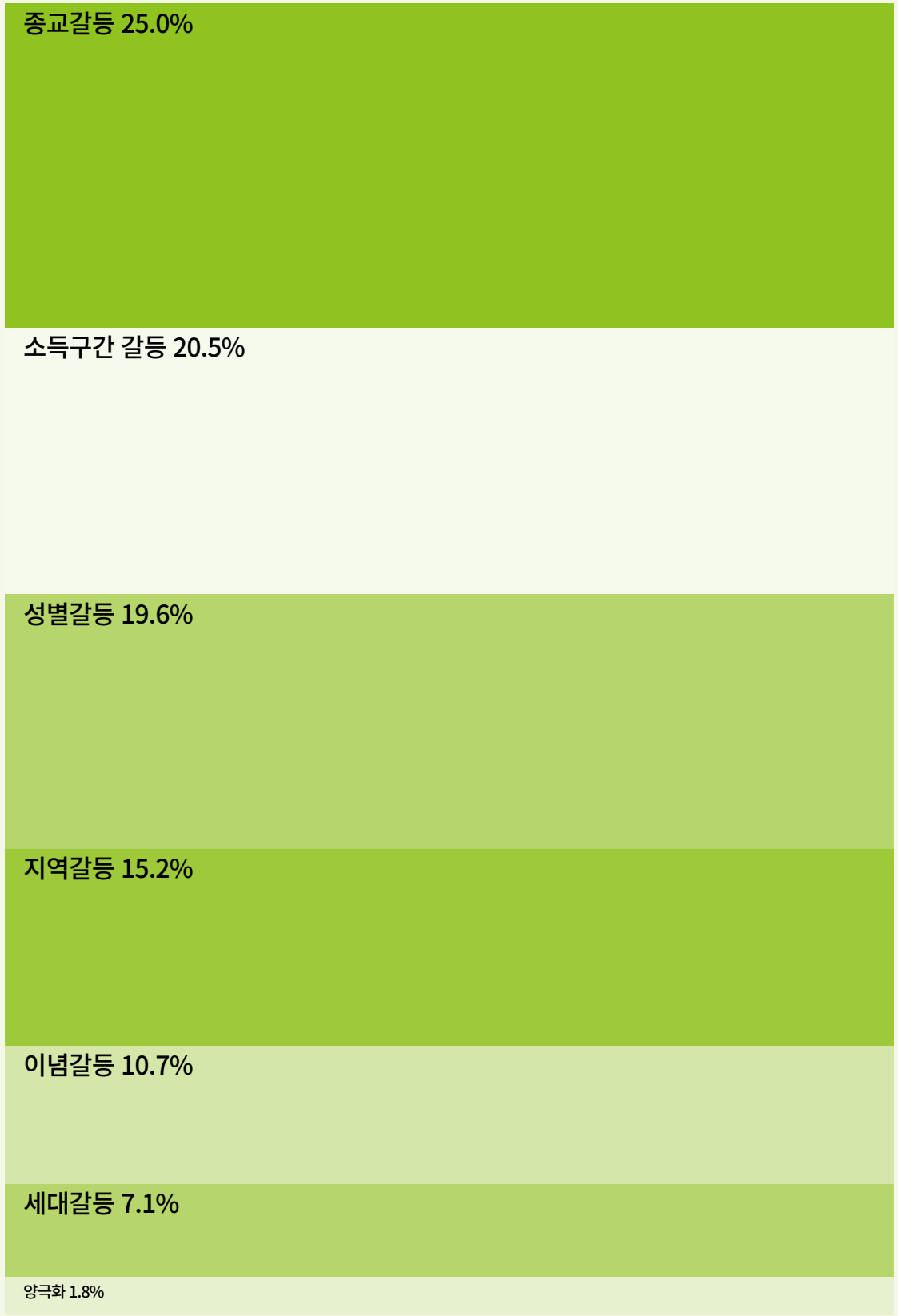
- 국방·소방·병원처럼 나라의 기본이 되는 곳, 장비 문제 없어야겠죠? (남궁옥)
- 왜 정부는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고 할까요? 책임 회피 아닌가요? (윤성원)

예산낭비

- 왜 공공기관들은 당해 연도 예산을 무리해서 소모해야 하나요? (지재용)
- 매년 멀정한 보도블럭은 왜 자꾸 교체를 하는 걸까요? (조석용)

기본생활보장

- 기본 소득보다 기본 소비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황대용)



사회 양극화 질문 빈도 비율

사회 양극화

'사회 양극화' 분야의 질문들은 갈등이 일상화된 한국 사회에서 서로 다른 정체성과 삶의 조건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종교, 성별, 소득, 지역, 세대, 이념 등 다양한 축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구조적 불균형과 혐오, 배제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영향력, 빈부격차의 고착화, 젠더 간 불신, 수도권 중심의 자원 편중, 극단화된 이념 대립, 그리고 단절된 세대 간 인식 차 등 양극화를 부르는 근본 원인들을 차례로 호출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공정한 제도 설계와, 근본 원인을 없앨 수 있는 사회적 상상력을 통해 더 나은 연대와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갈등

- 왜 사이비 종교 사기를 막는 종교사칭금지법은 없나요? (김영호)
-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가? (홍영준)
- 사회에 악한 영향을 주는 종교 단체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현충)
- 사이비 종교는 왜 이렇게 뻔뻔스러울까요? (김은영)

소득구간 갈등

- 수저론을 이제는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강영은)
- 빈부격차가 완화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심화되는 이유는 뭘까요? (조선익)
-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 과연 우리는 평등한가요? 경쟁은 공정한가요? (홍진우)

성별 갈등

- 극우화된 청년 남성을 대화로 끌어낼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승현)
- 가부장제의 잔재 철폐를 위한 사회적 논의·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상욱)
- 왜 우리는 페미를 사상 검증하는 잣대처럼 쓰는 걸까요? (정주나)

지역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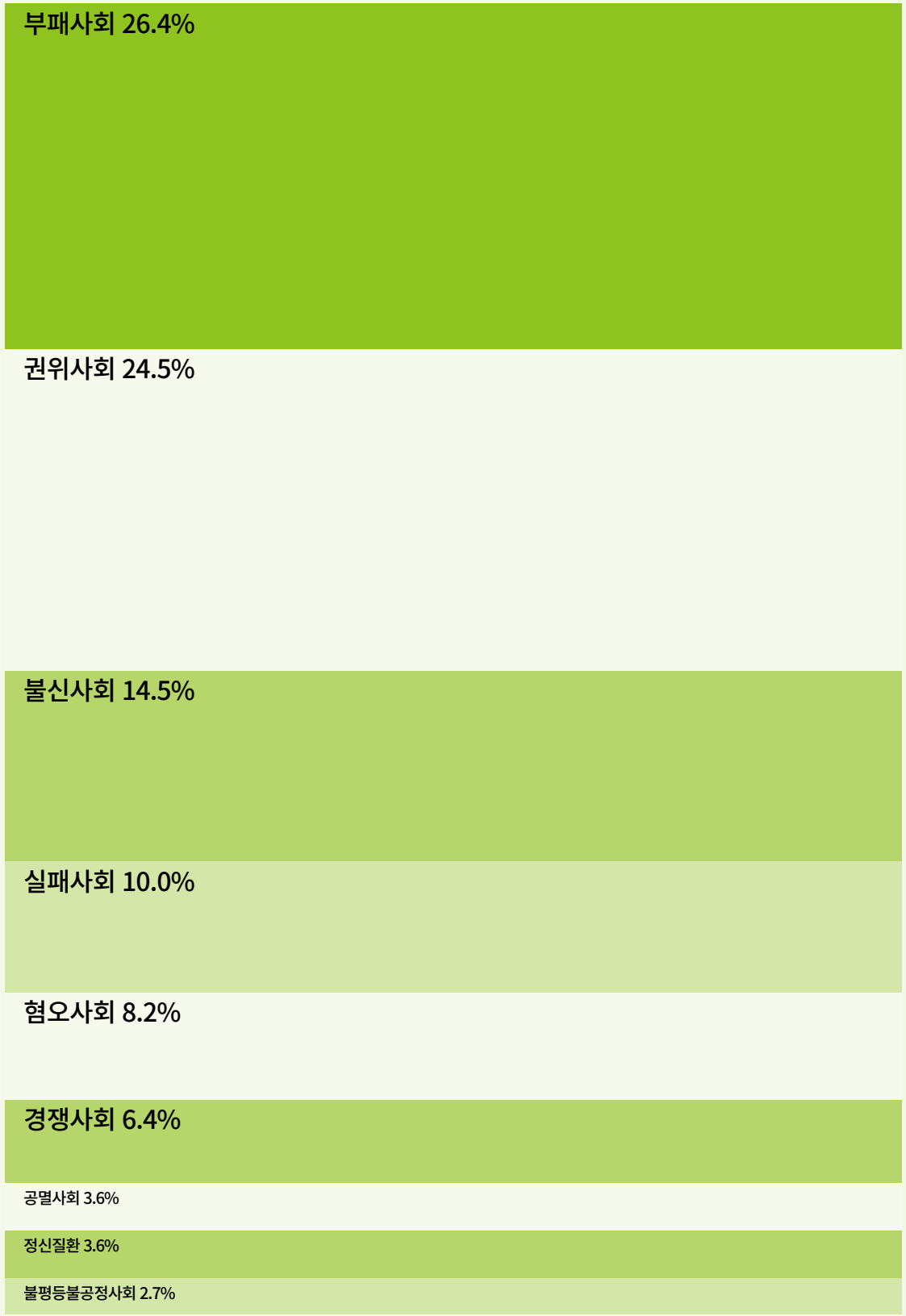
- 팽배한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정미영)
- 서울 강남에 살 때와 제주 서귀포에 살 때, 나는 왜 공동체로부터 다른 혜택을 받는가? (정국)
- 지방엔 일자리가 없고, 엄마는 철학 없이 육아하기가 막막합니다. 해법은 없을까요? (heeyoungpark7261)

이념 갈등

-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자본주의자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차병학)
- 우리 사회는 전체주의 의식을 어떻게 극복할수 있을까? (김철희)

세대 갈등

- 청년·중장년·노년 사이의 세대갈등을 풀어 나갈 방법은? (shadow1313a)



사회신뢰 질문 빈도 비율

사회 신뢰

'사회 신뢰' 분야의 질문들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가 무너진 구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기반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왜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더 손해를 보는 걸까?"라는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분노도 두드러집니다. "엘리트라는 집단이 만드는 문제의 뒤처리를 왜 항상 국민이 해야 하나요?", "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권한과 권리만 누리고 책임지지 않는 걸까요?" 등의 질문이 그 예입니다. 혐오 표현과 경쟁 중심 문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실패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고발하는 질문들은 모두 개인 간, 세대 간, 계층 간 신뢰가 약화된 결과로 우리 사회가 '공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공정하게 경쟁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약자에게 낙인을 찍기보다 함께 회복을 고민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문화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은 신뢰 가능한 공동체로의 복원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과 윤리적 상상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패 사회

- 우리 사회에서는 왜 규칙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볼까요? (성다야)
-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박찬식)

권위 사회

- 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권한과 권리만 누리고 책임지지 않는 걸까요? (정유미)
- 왜 공권력은 강자들의 고민만 해결하려 할까요? (백정혜)

불신 사회

-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미진)
- 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은솔)

실패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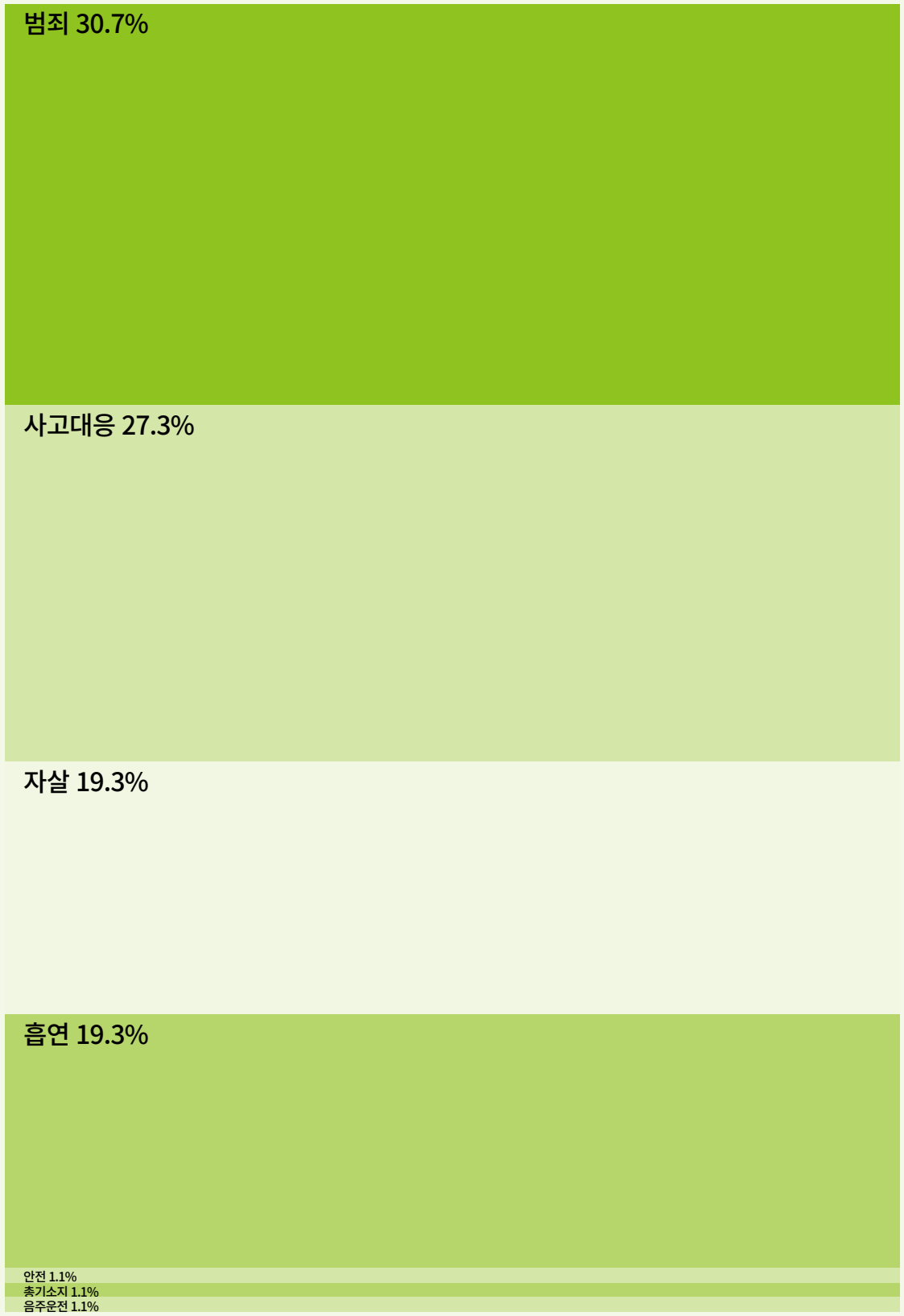
- 왜 우리 사회에는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달릴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황상욱)
- 대한민국에서는 왜 '열심히 살면 잘산다'라는 명제가 성립되지 않는가? (정용호)

혐오 사회

- 저부터 혐오에 물들었어요. 이 사회의 혐오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황아현)
- 혐오와 폭력이 없는, 다름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사회는 언제쯤 올까요? (한수진)

경쟁 사회

- 아이들이 성적 경쟁에 시달리는 대신 마음껏 놀아도 되는 사회가 올 수 있을까요? (김기완)



재난관리 질문 빈도 비율

재난관리

'재난관리' 분야의 질문들은 무엇보다 한국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얘기합니다. "왜 우린 참사의 원인 규명을 못 하는 것일까요?", "사회적 참사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가족은 왜 납득이 되는 설명을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들을 수 없나요?" 등의 질문은 보다 실효성 있는 참사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자살률 세계 1위 국가로서의 구조적 문제,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들은 모두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시민들은 흡연 문제나 안전 인프라 부족과 같은 생활 밀착형 이슈부터 전 국민 총기 소지와 같은 논쟁적인 사안까지 두루 논의하면서, 재난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 위기이며 사회 전체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범죄

- 징벌적 배상제도가 우리 사회 전반에 시행되는 건 불가능할까요? (황정희)
- 음주운전은 중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왜 문화는 현격히 개선되지 않을까요? (윤용학)
- 범죄자를 강력한 규율로 억압해 수를 줄이는 게 사회 전체에 이득일까요? (오하림)

사고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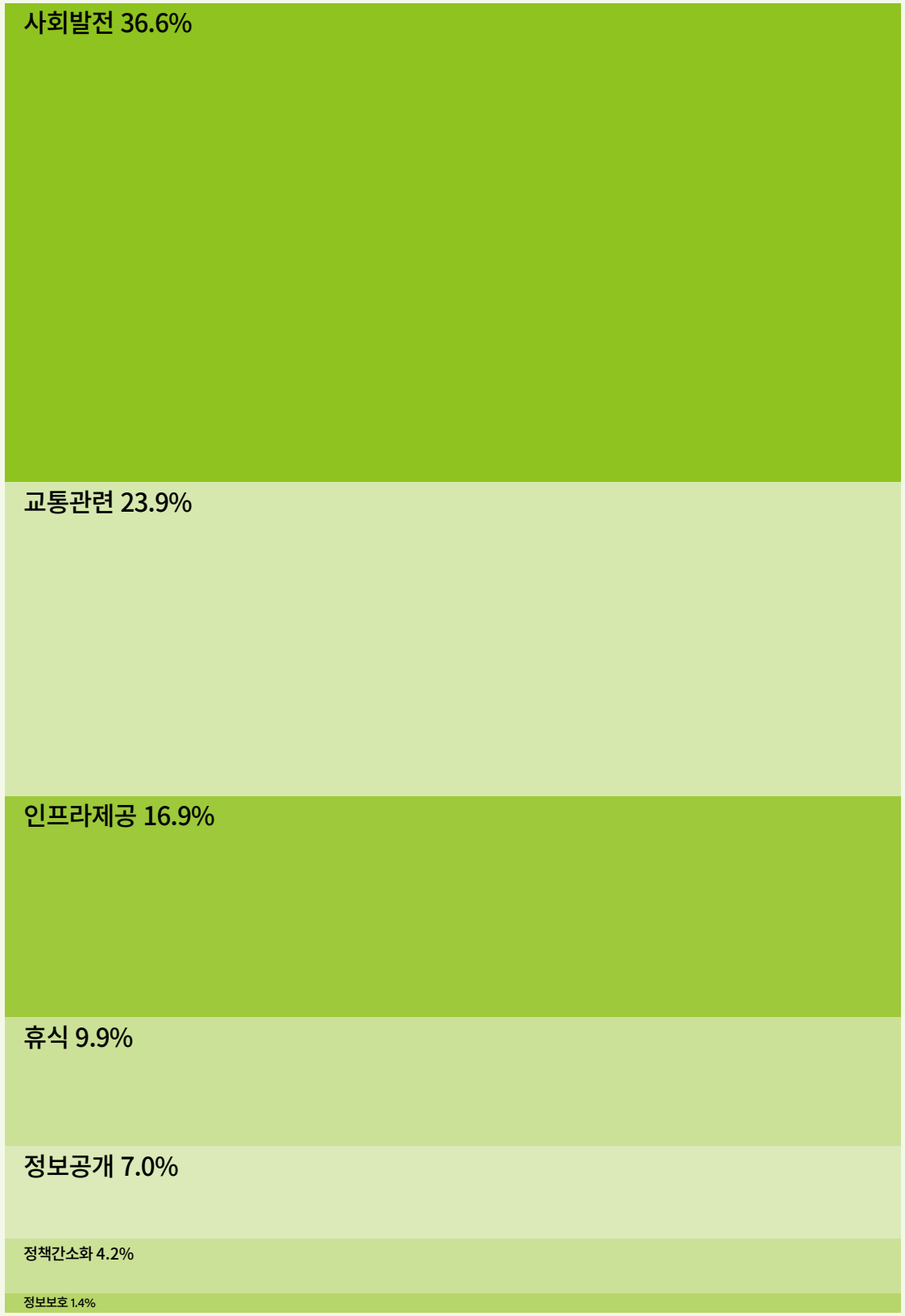
- 왜 우린 참사의 원인 규명을 못 하는 것일까요? (김형윤)
- 사회적 참사 유가족은 왜 납득이 되는 설명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나요? (김승현)
- 우리 사회는 전쟁·재난의 위험에 얼마나 대비되어 있을까? (이동원)

자살

- 한국의 자살률은 왜 이렇게 높은가?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박선영)
-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데 저출생만 해결하면 인구문제가 나아질까요? (김기연)
- 행복지수 OECD 꼴찌 수준, 한국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건석)

흡연

-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길거리 흡연,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홍승우)
-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영후)
- 왜 흡연하는 사람들은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나? (조승연)



국민 권익 질문 빈도 비율

국민 권익

'국민 권익' 분야의 질문들은 더 나은 삶의 질, 공정한 제도, 투명한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 방향성과 사회발전 전략부터 교통안전과 보험, 공공 인프라의 질, 휴식과 공휴일 제도 등 일상에서 체감되는 권익 향상 방안까지 다양한 생활 밀착형 주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 간소화, 정보공개, 창의적 자산 보호 등 정책 접근성과 제도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요구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개인의 권리가 보호받고,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며, 모든 국민이 사회의 주체로 존중받는 구조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권익 중심형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사회발전

-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며 혁신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고유전)
-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조봉국)
-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강화중)
- 인구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승윤)

교통 관련

- 오토바이(배달 라이더)의 법규 무시는 왜 제재하지 못하나요? (송영규)
- 왜 자동차 급발진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박용진)
- 자동차 보험료와 사고 처리 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되나요? (김명재)

인프라 제공

- 왜 우리의 공공 환경과 서비스는 늘 가장 싸고 초라하게 만들어질까요? (윤성원)
- 전국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건 어려울까? (조세열)

휴식

- 우리는 언제쯤 유럽처럼 여름휴가를 한 달 갈 수 있나요? (최경희)
- 국민 모두에게 평생 한 번, 안식년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 가능할까요? (신동훈)
- 일부 공휴일을 일반 기념일로 바꾸고 명절 연휴를 늘리면 어떨까 합니다. (강치원)

정보공개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화하지 않는 이유는? (김종갑)
- 국가자본의 사용처와 오남용 시 개선 방안,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나요? (김시연)
- 정상적인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 완전한 정보공개입니다. (전종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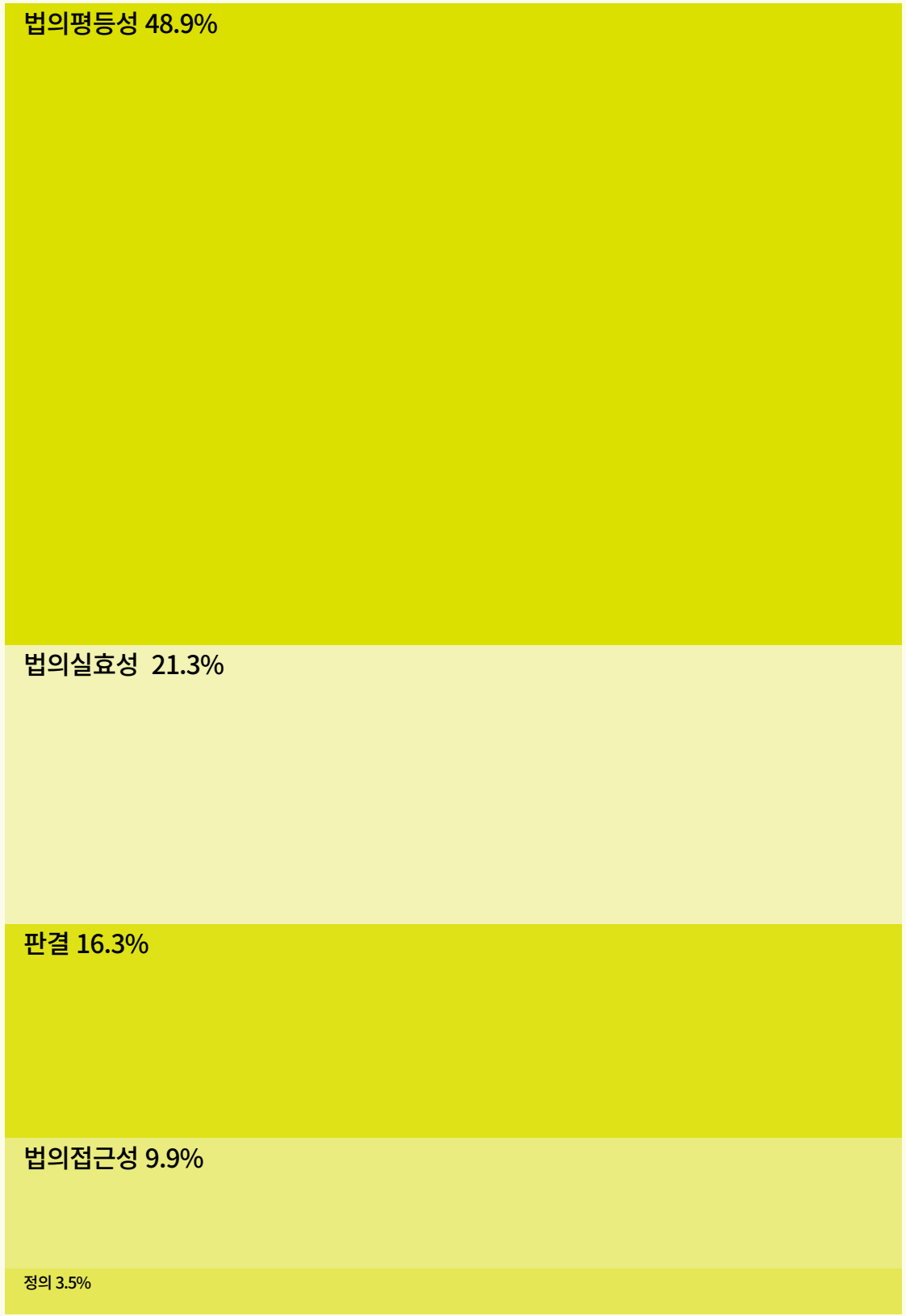
법과 윤리

‘법과 윤리’ 분야에서 시민들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해 묻습니다. “검사가 해야 할 기소를 하지 않을 때 기소를 강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고, 잘못된 기소를 해서 패소했을 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비슷한 사건이라도 판사가 다르면 형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 맞을까요? 판사의 판결은 비판이 대상이 될 수 없나요? 판사는 항상 옳은가요?”라는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기반이 되는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닐까요?” 등의 질문들은 정의롭고 공정한 법치주의 실현,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 그리고 시민이 법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 혁신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공정성과 사법개혁 분야에서 검찰과 법원의 권력 남용, 불공정한 판결, 전관예우 철폐, 접근이 어려운 법 체계에 대한 불만을 호소한 시민들은 ‘법은 누구를 위한 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법과 질서 및 생활 치안 영역에서는 사기,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등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촉법소년, 심신미약 감형, 공소시효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동물권, 교통법 등 생활과 밀접한 법제도의 현실성을 문제 삼으며 생활 속 정의의 회복을 희망합니다. 법률 제정 및 입법 방식 분야에서는 정당방위, 미성년자 보호, 긴급차량 보호 등 시민의 일상을 위한 구체적 입법을 제안하며 AI 판사 도입, 배심원제 확대, 국민 감시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법 집행의 민주성과 기술적 혁신을 제안합니다. 법조인의 역할 및 자격과 관련한 질문들은 법조계 진입 경로의 다양화, 사법시험 부활, 사법기관 고위직의 국민 선출제 도입, 윤리 기준 강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중심으로 제도 전반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검사의 책임성 강화, 퇴직 후 변호사 개업 제한, 전관예우 폐지 등이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법치 영역에서는 내란, 계엄 등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 대통령의 거부권·사면권 등 권력 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 등 정치권력과 법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분야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 재판 공백, 국민 대표성에 대한 의문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 질서의 재구성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법이 단지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 줍니다. 법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일상의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살아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 공통의 열망이 이 분야의 질문들 안에 녹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은 법과 윤리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신뢰 사회를 위한 제도 혁신, 시민 참여 확대를 요구합니다.

법과 윤리 질문 빈도 비율



공정성 질문 빈도 비율

공정성

'공정성' 분야의 질문들은 법 앞의 평등과 정의 실현이라는 기본 원칙이 실제 사회에서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권한 남용, 기소 편향, 판사의 자의적 판단 등으로 인한 불평등한 법 집행과 판결의 일관성 부족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뒤흔듭니다. 견제할 수단이 없이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제도적 공백, 현실과 괴리된 법의 실효성, 일반 시민에게 어려운 법률 용어와 접근 방식, 폐쇄적인 판결 정보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 구조, 부조리 앞에 침묵하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담은 질문들은,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 제도 전반의 투명화, 표준화, 그리고 시민 참여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며, 법이 진정한 공공의 질서로 기능하기 위한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의 평등성

- 검사가 해야 할 기소를 하지 않을 때 기소를 강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고, 잘못된 기소를 해서 패소했을 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권영효)
- 법원이 편향적이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이철호)
- 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풍조가 없어지지 않는가? (우준식)

법의 실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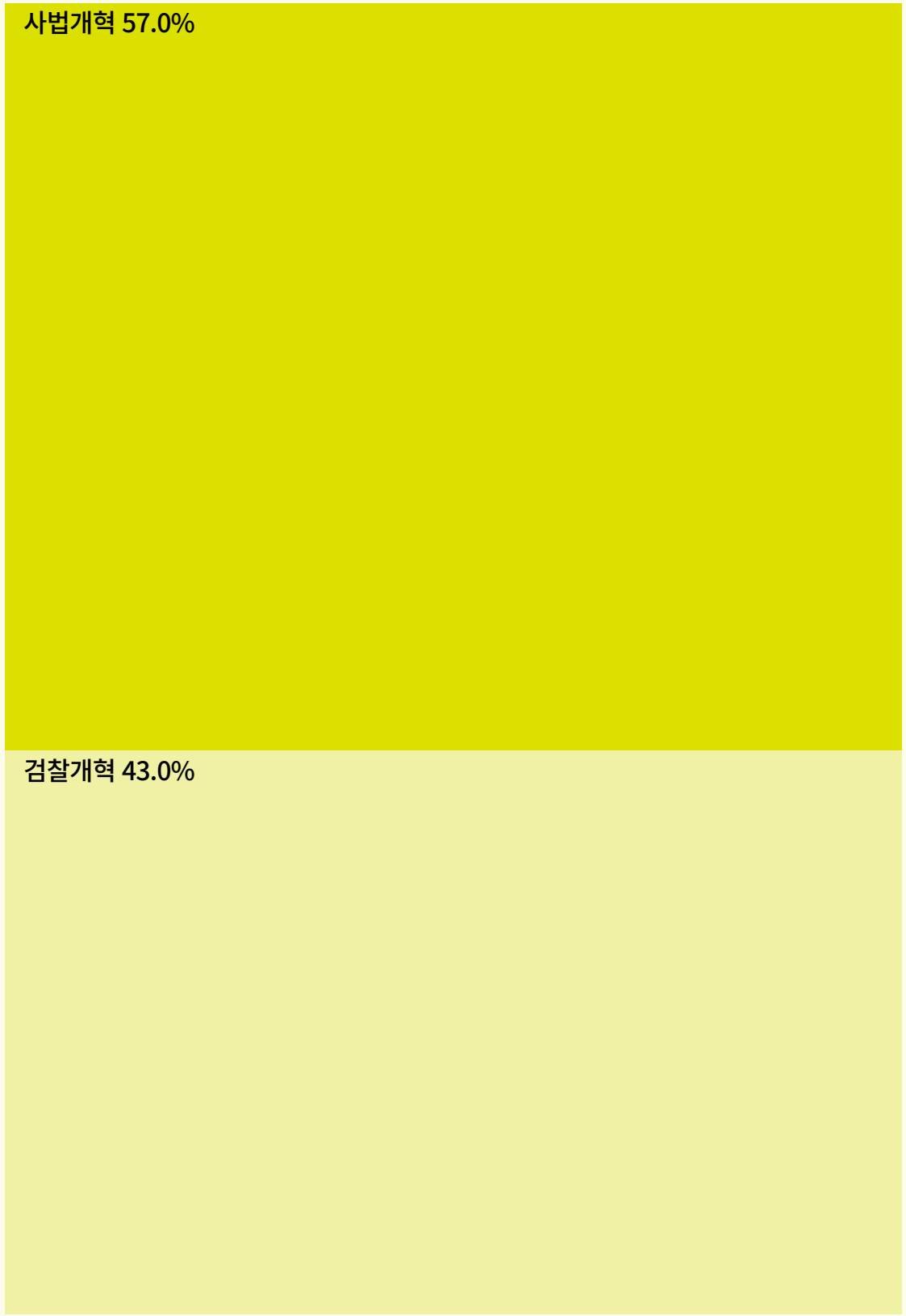
-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던데요. 악용의 소지가 많아 보여요. 사건 종결밖에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김민정)
- 과태료로(돈으로) 겁을 주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용수)
-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법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김해준)

판결

- 비슷한 사건이라도 판사가 다르면 형이 다르게 나오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판사의 판결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판사는 항상 옳은가요? (이홍원)
- 판결문 비공개, 민주주의 국가에선 부적절한 일 아닐까요? (최환석)
- 판사들이 판결한 내용을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번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형)

법의 접근성

- 법률 용어들은 왜 어려운 말로 되어 있나요? (오연경)
- 법원의 판결문, API 형태로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안영회)
-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피해자는 왜 볼 수 없나요? (배혜정)



사법 개혁 질문 빈도 비율

사법 개혁

'사법 개혁' 분야의 질문들은 사법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 항목에서는 판사·검사 출신의 전관예우, 사법부의 책임성 부족, 부당한 판결에 대한 제재 방안 등 제도적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찰 개혁 항목에서는 검언유착, 선택적 수사, 사건 배당의 불공정 등 검찰 권한의 남용 문제에 대한 강한 우려 속에서 공수처 권한 확대, 견제 장치 마련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법 위의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시민들의 강한 요구를 반영하며, 민주주의에 걸맞은 사법 정의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

- 판사, 검사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전직 판사, 검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지 않나요? (강치원)
- '유전무죄, 무전유죄' 풍조,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나요? (유지안)
- 왜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 지수가 135개국 중에서 꼴찌 수준인가요? (asajong33)
- 사법부 판결에 대한 평가는 왜 없는가? (박정원)
- 왜 사법부는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가? (정민규)
- 사법부 고위직, 왜 투표로 선출되지 않을까? (김용성)
- 선입견을 가졌거나, 외압을 받았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잘못 판결한 판사는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 (노청호)

검찰 개혁

- 검언유착·선택적 업무 지연, 막을 법안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효진)
-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나대봉)
- 검찰의 기소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는 왜 없을까요? (곽대종)
- 공수처의 권한과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수일)
- 검찰 상부의 부당한 사건 빼앗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박준학)

법과 질서 질문 빈도 비율

법과 질서

'법과 질서' 분야의 질문들은 정의와 안전, 법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혁과 법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기, 성범죄, 마약, 전세 사기 등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요구합니다. 또한 공소시효, 집행유예, 촉법소년, 심신미약 감형 등과 관련하여 현행 형법과 그 적용 절차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사법 피해자 구제와 책임 소재 명확화 등을 통해 공정한 법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경찰과 사법기관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도 높으며, 소득별 차등 벌금제 도입, 범죄수익 환수 등 형사제도 전반에 걸친 사회적 재검토에 대한 요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법이 단지 형식적 정의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존엄, 공정한 질서를 위한 실질적 도구로 작동하길 바라는 시민들의 강한 바람을 보여 줍니다

처벌 수위

-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별 차등 벌금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난가)
- 술과 마약에 빠진 이들이 사고를 치면 왜 심신미약 상태라며 감형을 해 주나요? (이중희)
- 우리나라는 왜 징벌적 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지 않는가? (박성만)

사기죄

- 사기꾼 형량 상향, 검거율 상향, 적극적 피해 회복제도가 필요합니다. (손흥민)
- 민주사회의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짓말을 처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종남)
- 사기를 친 사람의 형량도 너무 낮습니다. 청소년에 맞는 형량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개선할 수 없을까요? (김용진)

성범죄

- 2차 가해 또는 상처 없이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가능할까요? (명미혜)
-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왜 국민 정서보다 낮은가요? (이강준)
- 성매매, 진짜 없애지 못하는 건가요? 없애지 않는 건가요? (김강섭)

처벌 강화

- 전과가 늘어날수록 가중처벌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조용환)
-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들의 형량 상향은 왜 그리 어려운가요? (오광섭)

사법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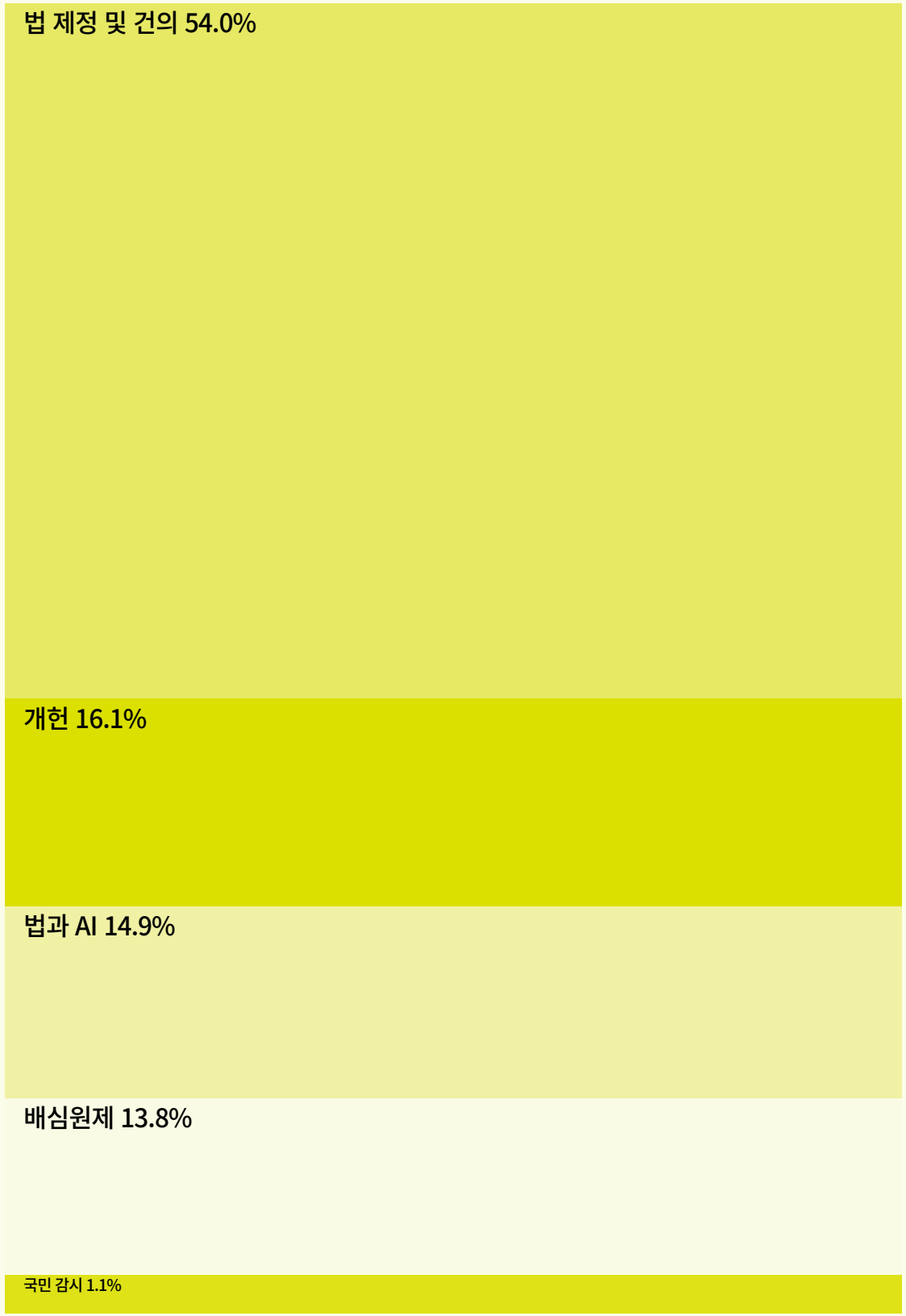
- 수십 년 옥살이를 한 뒤 무죄판결, 애초에 죄 없는 사람을 가둔 그들은 누가 벌줍니까? (박소영)
- 사법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박숙정)

마약

- 마약 범죄에 대한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근재)
- 공항 마약 밀수범을 도와준 세관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지 않나요? (민선주)

공소시효

- 범죄에 왜 공소시효를 두나요? (정영국)
-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늘려야 합니다. (공진세)



법률 제정 및 입법 방식 질문 빈도 비율

법률 제정 및 입법 방식

'법률 제정 및 입법 방식' 분야의 질문들은 법과 제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방식의 혁신을 요구합니다.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시민 참여의 확대입니다.

배심원제 도입 및 확대, 국민 감시자 제도에 대한 제안은 법 제정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됩니다. 시민들은 정당방위, 미성년자 보호, 긴급차량 보호 등 실생활 밀착형 법안 개선 요구를 통해 일상 속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 역할 재조정, 시민 중심의 개헌 논의 등 헌법의 현대화와 사회적 합의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신은 AI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시민들은 AI 판사나 검사의 도입을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며, 특히 인간 판결의 편향성과 부조리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으로서의 AI를 주목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법을 단지 전문가의 영역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책임지는 공공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법 제정 및 건의

- 소방차,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출동할 때 협조하지 않는 운전자 등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법적으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종욱)
- 정당방위 성립 요건 조정 및 인정 범위 확대는 언제쯤 가능할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법을 바꿀까? (안태용)
-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피해를 보호자가 보상하게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화향)

개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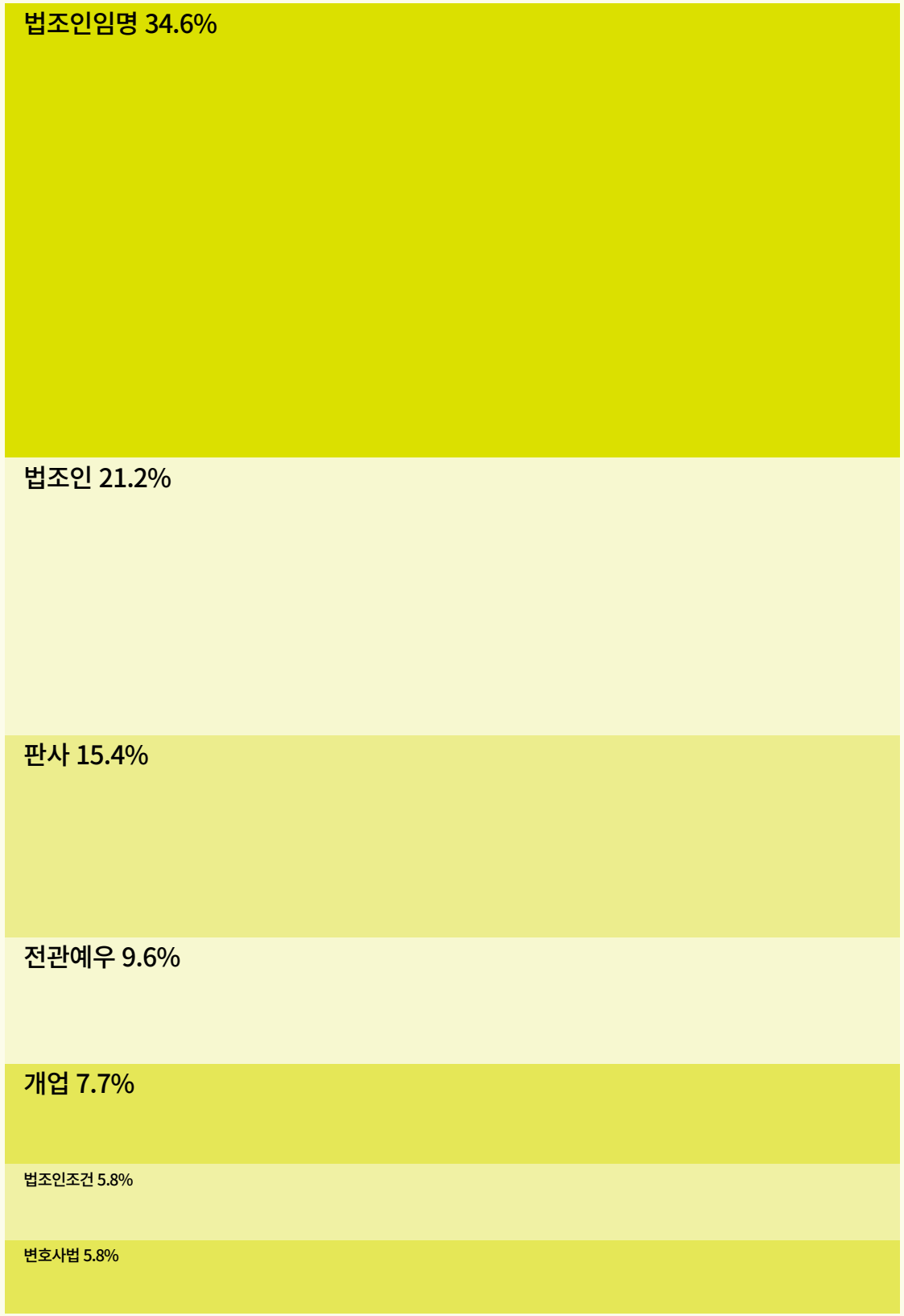
- 헌법을 개정할 경우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 권한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강호영)
- 시민 참여형 헌법 개정을 할 수는 없는지요? (임유한)
- 국민들이 왜 헌법을 공부해야 합니까? 개헌, 진짜 필요합니까? (차병직)

법과 AI

- AI 판사를 적극 도입하여 대법관에 과도하게 집중된 업무도 해결하고 국민 정서와 반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평규)
-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 기소 판결을 봉쇄할 AI 도입 서둘러야 하지 않나요? (김철수)
- 검사와 판사를 신뢰할 수 없는 시대, AI로 사법 체계를 변혁할 수 있을까요? (이정우)

배심원제

-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 배심원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경희)
-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재판에서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오면, 해당 재판에 배심원제를 자동 적용하도록 할 수 없을까? (최기호)
- 대국민 배심제도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도입하고 나면 법관과 수사관들이 법률에 입각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준서)



법조인의 역할과 자격 질문 빈도 비율

법조인의 역할과 자격

'법조인의 역할과 자격' 분야의 질문들은 법조인의 임명 방식, 자격 기준, 윤리, 책임성, 전관예우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사법 신뢰와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우려는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시민들은 고위 검사나 판사의 선출직 전환, 로스쿨 중심 구조에 대한 비판과 사법시험 부활 요청 등을 통해 법조계 진입 경로를 다양화하고 공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판결 오류나 편향된 판결에 대한 판사의 책임 강화, 판결 검증 시스템 도입, 상식과 법의 괴리 문제 해결 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퇴직 판검사의 전관예우 문제, 개업 제한 필요성, 법조인들의 정치 참여 제한, 윤리 기준 강화 등에 대한 질문들은 법조계 내부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연결됩니다.

'법조인도 공직자'라는 시민들의 인식은 법조인을 신뢰받는 공복(公僕)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며,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 직무 책임성, 자격 박탈 기준 정립 등 전면적인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조인 임명

- 고위급 검사를 선출직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남창명)
-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사법시험과 같은 시험을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배윤상)

법조인

- 판검사도 잘못된 판결을 하면 직을 잃거나 불이익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준석)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없게 하고, 판사나 검사는 퇴직 후 5년 이내에는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종규)

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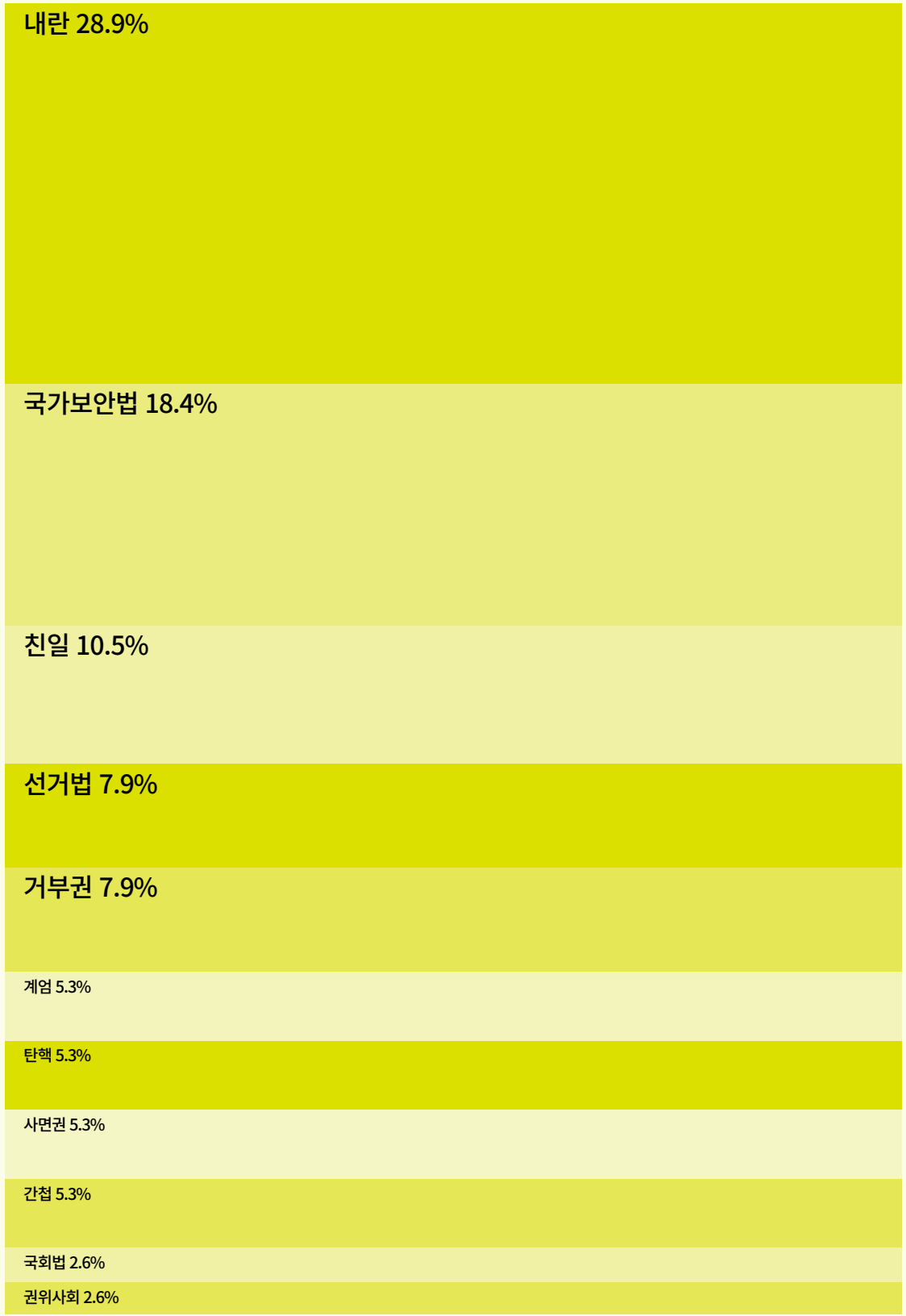
- 법원 판사의 판결에 대한 검증 및 인사고과 시스템이 있나요? (박정원)
- 우리나라에서는 왜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최종 판결을 하나요? (안재훈)
- 판사들은 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판결을 내리나요? 판사가 상식에 벗어나는 판결을 해도 국민은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박기표)

전관예우

- 전관예우가 왜 있는 거죠? (문정)
- 전관예우는 정말 필요한가요? (홍세민)

개업

-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키면 어떨까요? (정명래)
- 현직 검사 또는 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있나요? (최재호)



법치 질문 빈도 비율

법치

'법치' 분야의 질문들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공직자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 그리고 국가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국민 주권의 실현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내란, 간첩, 친일, 계엄령과 같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며, 느슨한 조처들이 재발을 부추긴다고 우려합니다. 국가보안법, 국회법, 선거법 등 주요 법률의 적용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에 대한 불신도 나타나고 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사면권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집니다. 또한, 탄핵제도나 선거법 개정, 국회의 책임성 강화 등은 국민 주권에 기초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법이 권력을 지닌 자에게만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은 '권위주의적 법치'가 아닌 '민주적 법치'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질문들은 정치와 권력, 법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향한 시민들의 절박한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란

- 반민특위처럼 실패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모두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양동원)
- 권력자의 독단, 헌법 위반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어떻게 막을까? (권재진)
- 다시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은 없는가? (오윤수)

국가보안법

-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을 막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영아)
- 국가의 블랙 요원을 사적으로 쓰는 권력자, 처벌할 법은 없나요? (주진택)

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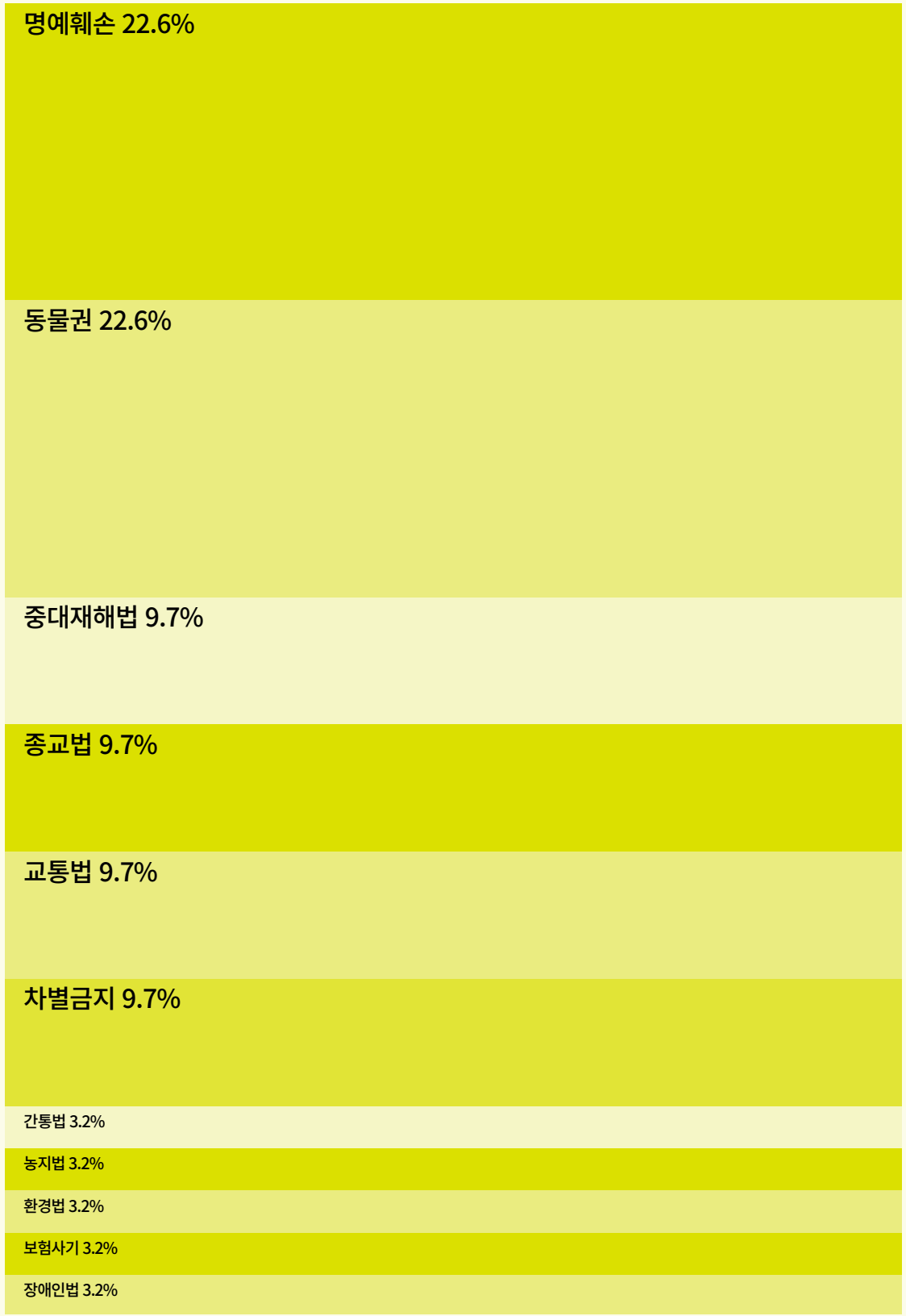
- 친일파의 재산을 왜 몰수하지 않을까요? 못 한다면 왜 못 하는 걸까요? (박세진)
- 적산 불하 과정에서 배제된 한국인, 침해된 권리를 보전할 방법은? (정흥민)

선거법

- 선거법 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김인숙)
-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재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내도록 하면 어떨까요? (황종락)

거부권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김정민)



생활 치안 질문 빈도 비율

생활 치안

'생활 치안' 분야의 질문들은 일상 속 법과 질서의 사각지대에 대한 시민들의 촘촘한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형법화하는 것은 어떨까요?"처럼 공익적 발언조차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명예훼손죄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 "강아지, 고양이 공장은 왜 존재해야 하나요?"와 같은 반려동물의 생명권과 복지 향상에 대한 질문들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법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가 어디인지를 보여 줍니다. 또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어린이 보호 구역의 정비, 교통사고 처리, 차별금지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 간통법 폐지 이후의 윤리 기준, 농지법과 환경법의 입법 공백, 보험사기 및 의료·수리비 과다 청구, 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 미흡 등을 얘기하는 질문들은 모두 개인의 안전과 존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생활 안전망을 개선하는 작지만 본질적인 법의 역할을 요구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와 신뢰의 기준을 다시 설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 공익 목적의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정경진)
-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형법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최근)

동물권

- 강아지, 고양이 공장은 왜 존재해야 하나요? (남정화)
- 동물 판매업을 아예 금지할 수 있을까요? (유민정)

중대재해법

- 안전 관련법이 강화되어도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영주)

종교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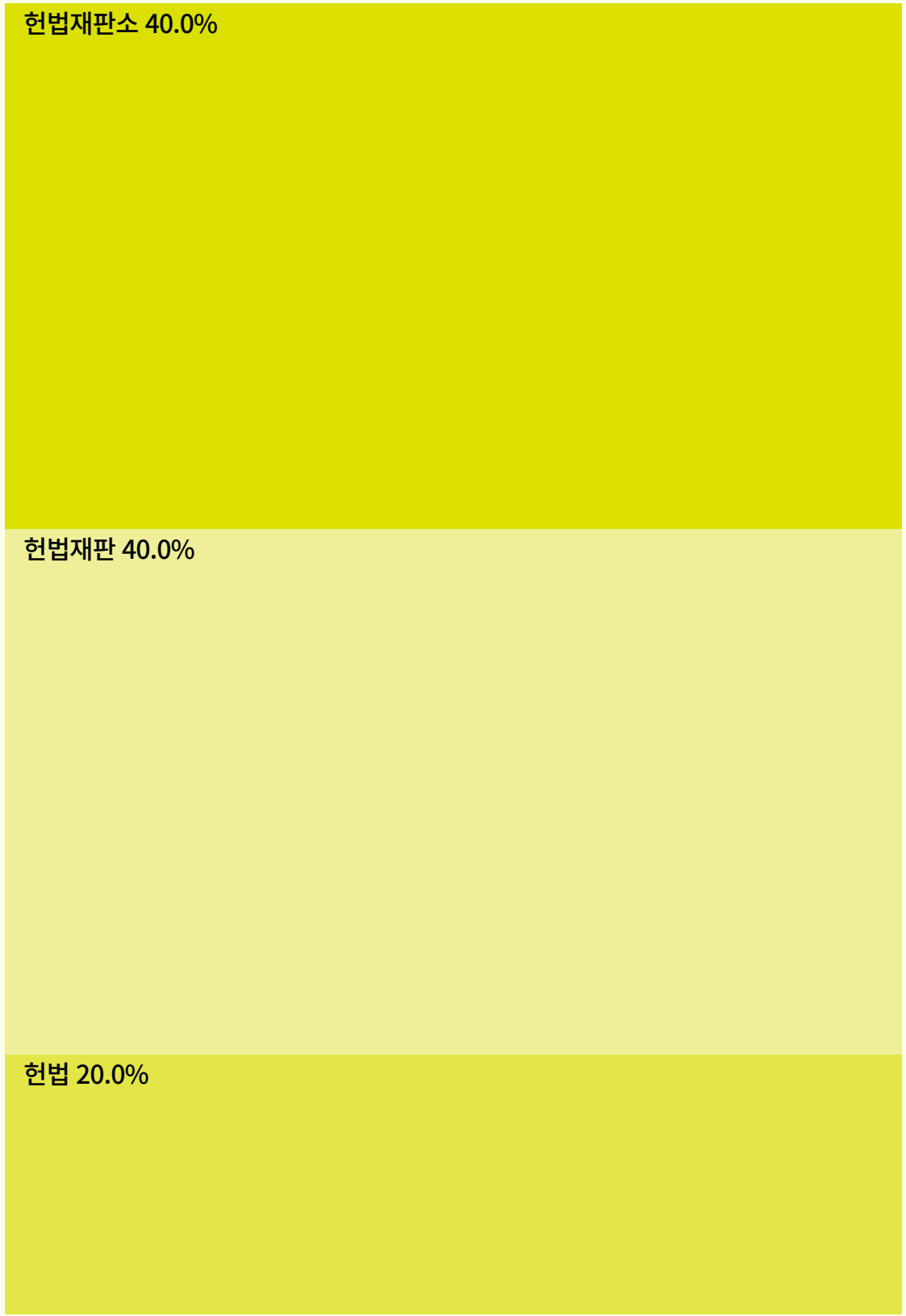
- 예수 안 믿는 기독교 목사,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가? (함인호)

교통법

- 어린이 보호 구역의 속도 준수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성)
- 단순 교통사고를 경찰에서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강주)

차별금지

-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혐오 발언을 해도 되는 걸까요? (김병수)
-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성철)



헌법 질문 빈도 비율

헌법

'헌법' 분야의 질문들은 국가 최고 수준의 법인 헌법의 실효성과 정당성, 그리고 헌법재판 제도의 민주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헌법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가?', '시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국민은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의 공백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헌법재판관 후보제 도입,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 인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안전망 강화 요구는, 헌법이 단지 선언적 규범이 아니라 국민 주권과 정의 실현을 위한 살아 있는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바람을 보여 줍니다.

헌법과 관련한 질문들은 헌법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국민의 참여 확대, 헌법의 생활화를 향한 민주적 재설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드러난 대통령 탄핵제도와 헌법, 헌법재판소 관련법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은? (김후영)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부 인원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같이 9인에서 16인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형)
- 검찰과 판사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믿음을 배신한 나의 나라 때문에 삶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상직)
-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당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해야 하는지요? (정재일)

헌법재판

- 헌법재판관 후보제를 도입해서 재판관 공백이 없게 해야하지 않나요? (정의철)
-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 대책 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최대식)
- 5000만 명이 투표해서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왜 9명의 헌법재판관이 최종 결정하는가? (양성중)
- 대통령 탄핵 인용을 왜 헌법 재판관들이 심리해야 되나요? (최창림)

헌법

- 법치국가에서는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원홍)
- 국민의 인권은 이제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나요? (김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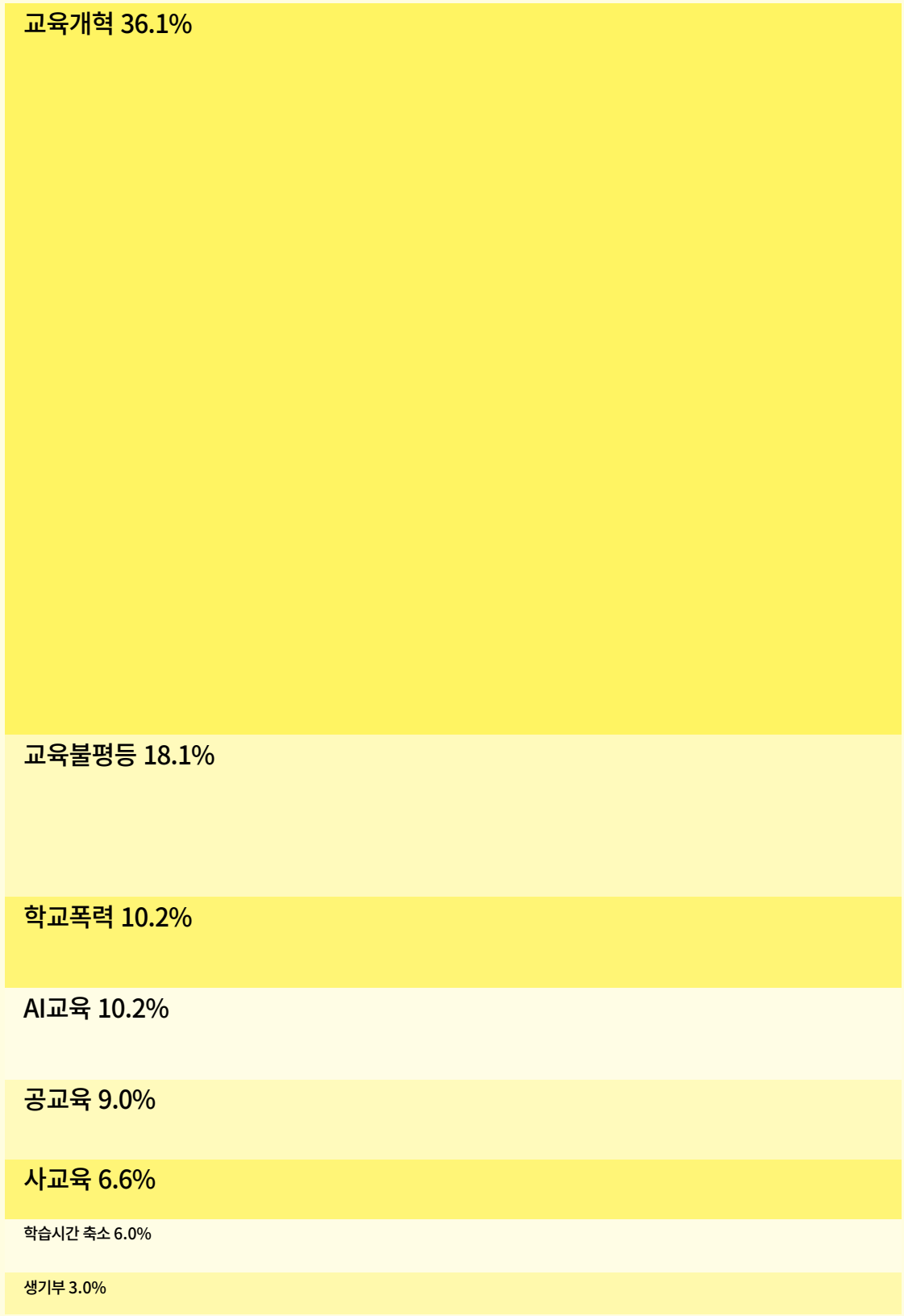
교육과 입시

"초등학교 사교육비 좀 줄여 주세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언제까지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해야 할까요?", "왜 우리 공교육의 목표는 여전히 수능일까요?" 등 '교육과 입시'에 관한 질문들은 시민들이 공교육으로 인해 받은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 줍니다.

교육제도 분야의 질문은 공교육 신뢰 회복, 격차 해소, 입시 구조 개혁, 선행학습과 사교육 문제, AI 시대 교육 부재를 지적합니다. 또한 학습시간 단축, 생활기록부 개선, 학교 운영 참여 확대를 요구합니다. 시민교육 분야에서는 민주시민 양성, 삶과 밀접한 윤리·법·금융 교육, 대안·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며 획일성을 넘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됩니다. 고등교육 분야의 질문들을 통해 시민들은 대학 서열화, 진로 다양성 부족, 전문대·로스쿨 접근성 문제 등을 지적합니다. 기본 교육 분야의 질문들은 균형 잡힌 역사교육, 교과 편중 해소, 예체능 수업 확대, 초등교사 업무 부담 경감 등을 다루면서 전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와 이를 위해 필요한 환경 정비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입시제도 분야의 질문들은 수능 중심의 경쟁과 엘리트 구조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여 주며, 진정한 학습의 회복을 요청합니다. 교육 방향 분야에선 교권 회복, 독서·토론 교육, 교육 윤리·시험 제도 개선, 학력 차별 해소 등이 논의되며, 교육을 지식 전달이 아닌 삶을 위한 배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인프라 안전성, 예산·인사 운영, 교사 처우와 권리, 교원 양성, 학자금 제도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지원 체계 개선을 촉구합니다. 교육 개혁 분야에서는 낡은 관행과 특수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두드러집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질문을 던진 시민들은 전 생애에 걸친 학습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는 집단적 성찰이며, 시민들은 교육을 개인의 존엄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로 재정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과 입시 질문 빈도 비율



교육제도 질문 빈도 비율

교육제도

'교육제도' 분야의 질문들은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한 교육의 방향성과 신뢰 회복,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 회복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 개혁 관련 질문들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선행학습 및 입시 중심 교육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교육 불평등 항목에서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격차, 정보 접근의 불균형 등 사회적 자원 배분의 불공정성을 우려하며, 교육 기회의 평등을 촉구합니다.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지능화되는 청소년 범죄와 피해자 보호의 어려움, 조사 주체로서 교사의 부담 등을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요구합니다. AI 교육 항목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학생들의 경제적 접근성, 공동체적 교육 가치 회복 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 관련 질문들은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 의존을 줄이기 위한 교사 수급, 수업 질 개선, 입시 위주 교육 구조의 탈피 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지 입시 성과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며, 공공성과 다양성을 회복한 교육을 향한 시민들의 절실한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개혁

- 우리 아이들의 교육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윤여경)
- 인구절벽을 대비한 교육정책이 보다 혁신적일 수 없을까요? (선미영)
- 선행학습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은 없을까? (오정근)

교육 불평등

- 사교육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현 상황에서 공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임은하)
- 아이들, 혹은 초중고 학생들의 정보 접근 기회가 균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진성)
- 왜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배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동원)

학교폭력

- 학폭 피해자가 원해도 학폭 가해자와 분리 배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하미선)
- 갈수록 지능화되는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줄일 수는 없을까요? (최정길)
- 학교폭력 조사를 선생님들이 해야 하나요? (배정현)

AI교육

- AI 세대에서의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김동욱)
- AI 시대에 공동체 중심의 협력이 강화되려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사원)

공교육

- 왜 우리 공교육의 목표는 여전히 수능일까요? (임현재)
- 사교육이 필요없는 양질의 공교육, 가능할까요? (조미정)
- 학교에서 한 반의 적정 학생 수와 교사 수급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수경)

사교육

- 사교육에 의한 교육 빈부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박중근)
-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박상민)

시민교육 질문 빈도 비율

시민교육

'시민교육' 분야의 질문들은 생활과 괴리된 현재 공교육의 결함을 지적합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사회적 책임, 삶의 기술을 학교 교육이 얼마나 잘 길러 주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단순한 지식 중심의 주입식 교육을 넘어서, 실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법과 권리, 다양성, 철학적 사고, 금융 이해, 공동체 의식, 윤리적 판단력 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시민교육 항목에서는 헌법과 선거 등 공공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는 공교육이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연결됩니다. 다양성 교육과 대안교육 분야에서는 획일적인 성적 중심 문화를 벗어나, 다양한 인재가 존중받고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철학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를 묻고 있으며, 이는 인성교육과도 연결되어 공감, 윤리,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진정한 배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금융 교육과 근로 교육 분야에서는 돈, 노동, 권리 등 실제 삶과 밀접한 내용을 다루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의 경제·노동 시민성을 기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성숙한 시민을 키우는 공동체의 기초 제도임을 강조하며, 현실에 뿌리 내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 철학과 체계의 재정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민교육

- 우리 사회의 공교육 내용 중에 '선거에 대한 교육'이 있나요? (이혜진)
- 초등학생 때부터 헌법을 포함한 기본적 법률을 가르쳐 주세요. (안학수)
- 건강한 시민 양성을 공교육이 할 수 있나? (김희영)

다양성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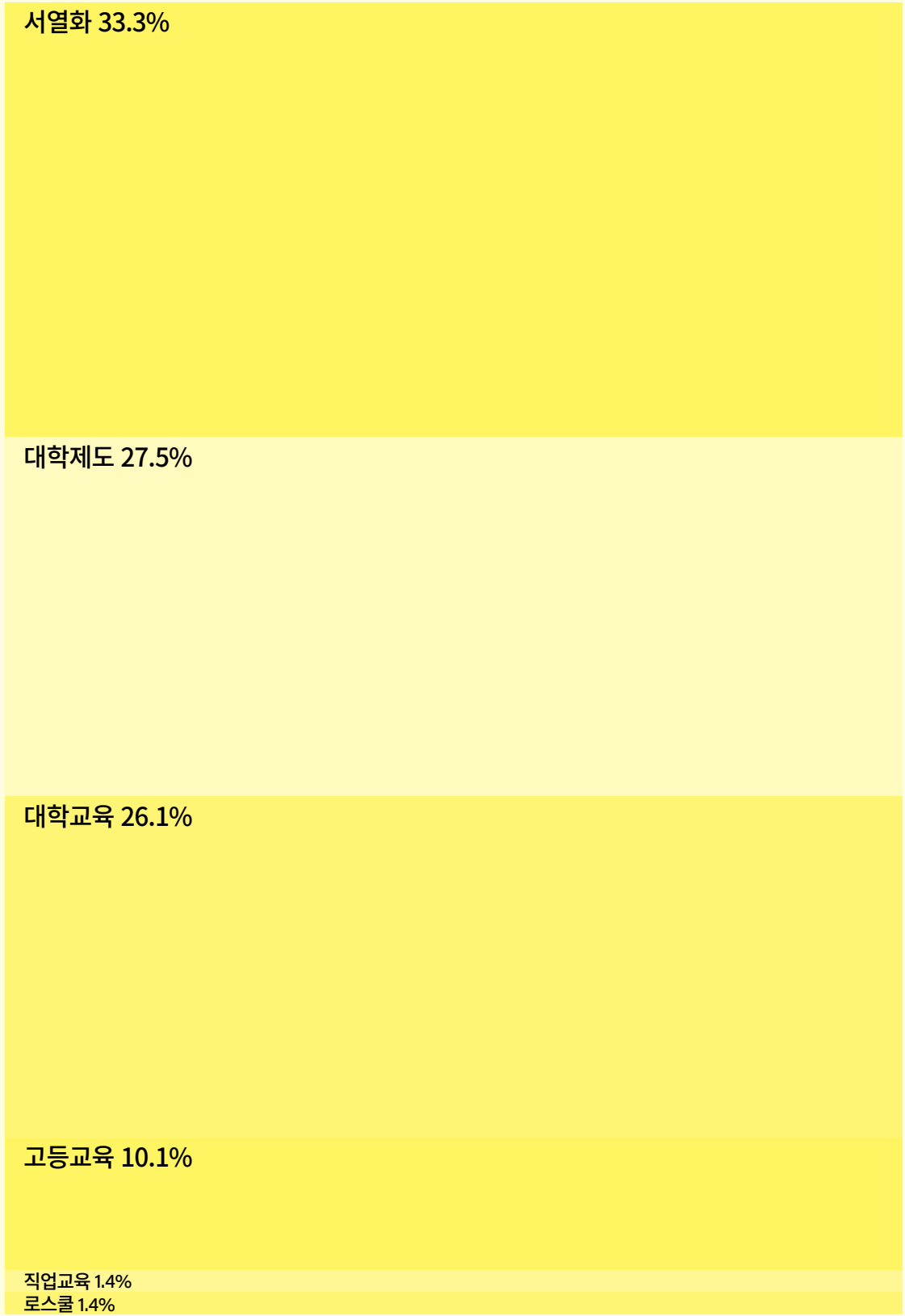
- 모든 아이들이 A를 받아 성적이 좋은,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어야만 할까요?(김주선)
- 교육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교육은 언제쯤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이병일)
-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은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 내고 있는가?(김강완)

철학 교육

- 왜 우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철학 교육을 시키지 않을까? (이삭)
- 한국 아이들은 언제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고 논술할 수 있을까요? (윤연정)
- 성적이 아닌 생각하는 배움, 진짜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손지연)

금융 교육

- 왜 우리는 학교에서 돈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나요? (송필종)
-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과 금융 교육을 한국도 교과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정진)



고등교육 질문 빈도 비율

고등교육

'고등교육' 분야의 질문들은 대학이 인생의 정답인 것처럼 여기는 사회적 관성과 줄 세우기식 입시 구조, 그리고 대학교육의 경쟁력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학 진학이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한 수단이자 구조적 서열화의 중심이 되어 버린 현실에 대해 우려하며, 교육의 다양성과 실질적 역량 중심의 제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열화 항목에서는 수도권과 의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 간 서열 구조와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학제도 항목에서는 '왜 모두가 대학에 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며, 대학 외 진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초봉 격차 해소, 졸업 기준 강화 등을 논하며 독일식 이원화 모델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과 고등교육 항목에서는 입학 이후의 교육 품질, 질문과 토론 중심의 교육문화 부재, 대학원생의 법적 지위 등 대학 내부 교육과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와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고등교육이 과잉 투자되는 사회구조에 대한 회의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이 갖는 과잉된 상징성과 기회 불균형, 그리고 실질적 교육 효용성의 결핍에 대한 날카로운 성찰이며, 지식과 자격이 아니라 삶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열화

- 줄 세우기식 입시제도하에서 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한가? (서문선)
- 현재의 주입식 서열화 교육이 미래세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정환)
- 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차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심규한)

대학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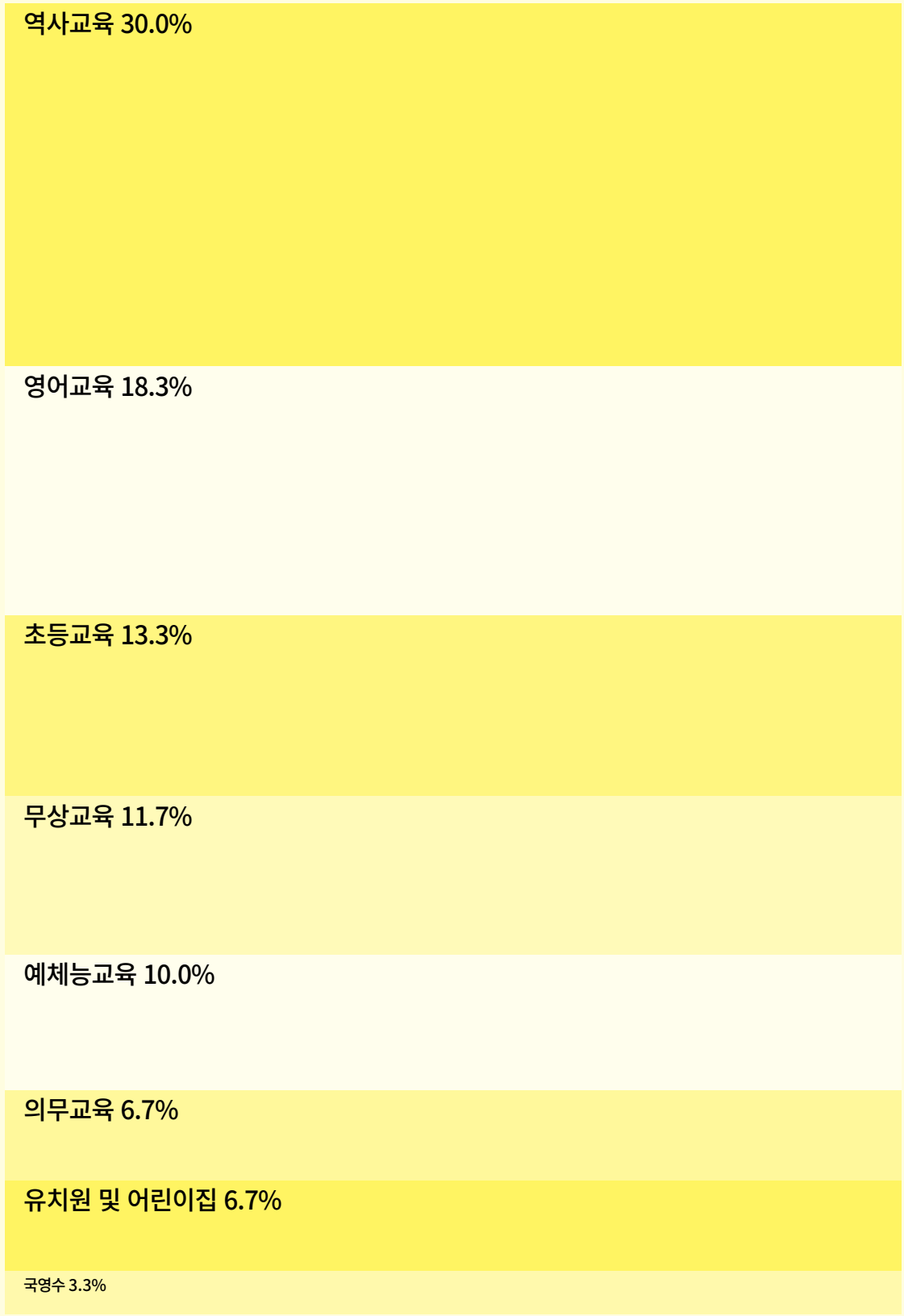
- 우리도 독일처럼 대학제도를 개편하여 졸업을 어렵게 하고,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의 초봉을 대학 졸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 (이상훈)
- 대학에 가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은 어떨까요? (지재우)
- 언제가 되어야 대학에 가지 않은 아이들이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홍진숙)

대학 교육

- 교육 품질 관리를 하지 않는 대학 교육으로 한국의 미래를 열 수 있는가? (신홍섭)
- 대학 입학시험이 없어지면 더 많이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나요? (김선호)
- 우리나라 대학은 정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김승주)

고등교육

- 고등교육이 필수처럼 되어 버렸는데 개선 방안은 없을까요? (장미)
- 100세 시대, 오래 잘 살려면 석사 과정을 새롭게 밟아야 할까요? (신새봄)
- 대학원생은 학생이 맞나요? (한진희)



기본 교육 질문 빈도 비율

기본 교육

'기본 교육' 분야의 질문들은 모든 아이가 동등하게 시작할 수 있는 교육의 출발선을 어떻게 만들고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의무교육의 실효성, 초등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과 과목 간 균형 문제에 주목하며, 기본 교육이 사회의 미래를 떠받치는 기반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육에 대한 지적은 여러 곳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납니다. 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있어 역사교육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항목에 대해 질문한 시민들은 너무 이른 시기에 사교육을 받게 되는 현실을 우려합니다. 초등교육과 유치원·어린이집 항목에서는 돌봄과 배움의 공공성 강화, 교사의 노동 환경 개선, 그리고 사립과 국공립 간 격차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최소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항목에서는 교육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 학부모 부담 완화, 공교육의 품질 제고가 함께 논의되며, 진정한 무상·의무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용 면제를 넘어 제도와 환경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체능 교육 항목의 질문에는 성적 위주의 평가에서 소외된 예술·체육 교육의 본질적 가치 회복과 활성화를 촉구하며, 아이들이 즐기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모든 아이가 공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진지한 성찰이며, 기본 교육이 단지 '기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존엄과 평등, 가능성을 보장하는 사회의 약속임을 재확인합니다.

역사 교육

- 왜 우리나라에는 독립투사의 역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교육이 만연합니까? (박승민)
- 바른 역사, 식량 주권 교육을 초등 저학년부터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요? (이기종)

영어 교육

- 공교육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수 있는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진영)
- 영어교육을 듣기·말하기 위주로 완전히 바꾸면 더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겠죠? (이종경)

초등교육

- 초등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철)
- 왜 초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있나요? (김외규)

무상교육

- 대학 무상교육은 언제쯤 실현 가능할까요? (최준호)

예체능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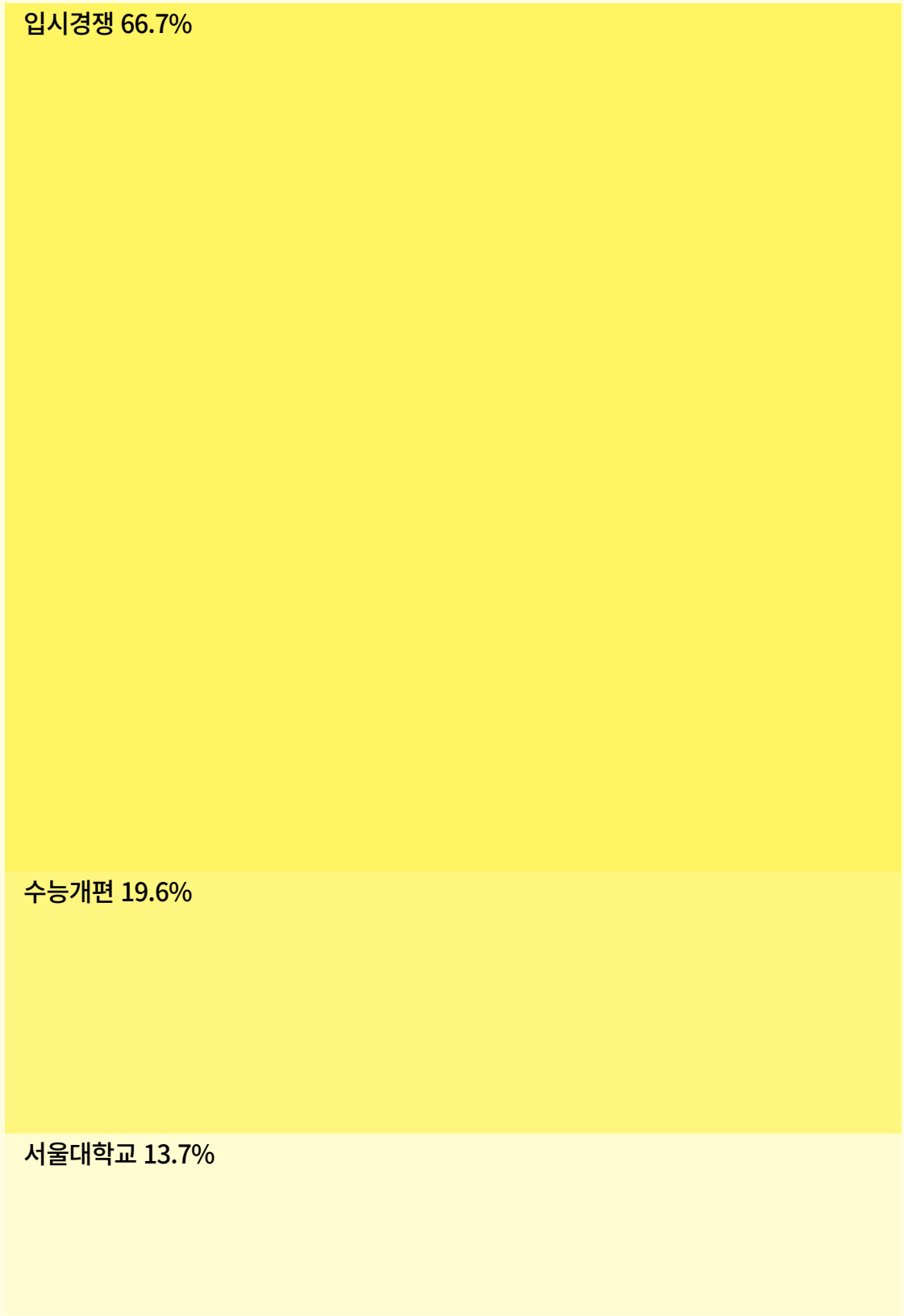
- 학교에서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체육 수업을 하도록 하면 안 될까? (김새롬)

의무교육

- 왜 당장 전 국민 고등학교 의무교육법을 만들지 않나요? (김영호)

유치원 및 어린이집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아동 대 교사 비율,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영미)



입시제도 질문 빈도 비율

입시제도

‘입시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입니다.

먼저 입시경쟁 항목에선 저출산 시대에도 줄지 않는 입시 경쟁의 과열, 대학 진학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 버린 현실, 창의보다 정답을 강요하는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제기됩니다. “인구절벽 시대인데도 왜 우리 아이들은 경쟁은 왜 더 치열해지는 걸까요?” 경쟁 중심 교육이 아이들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대학입시가 아닌 꿈일 순 없나요?” 다음으로 수능 개편에선 수능이 ‘순종적인 노동자’를 길러내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단일화된 평가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진정한 교육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능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항목에선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학벌 구조와 ‘서울대 공화국’이라 불리는 엘리트 중심 시스템의 해체 요구가 등장합니다. 서울대가 가진 상징성과 사회적 영향력에 비추어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존재 의미 자체를 근본적으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민들은 입시제도가 단순한 선발 시스템이 아닌, 한 사회의 가치관과 교육 철학을 반영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이 제도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입시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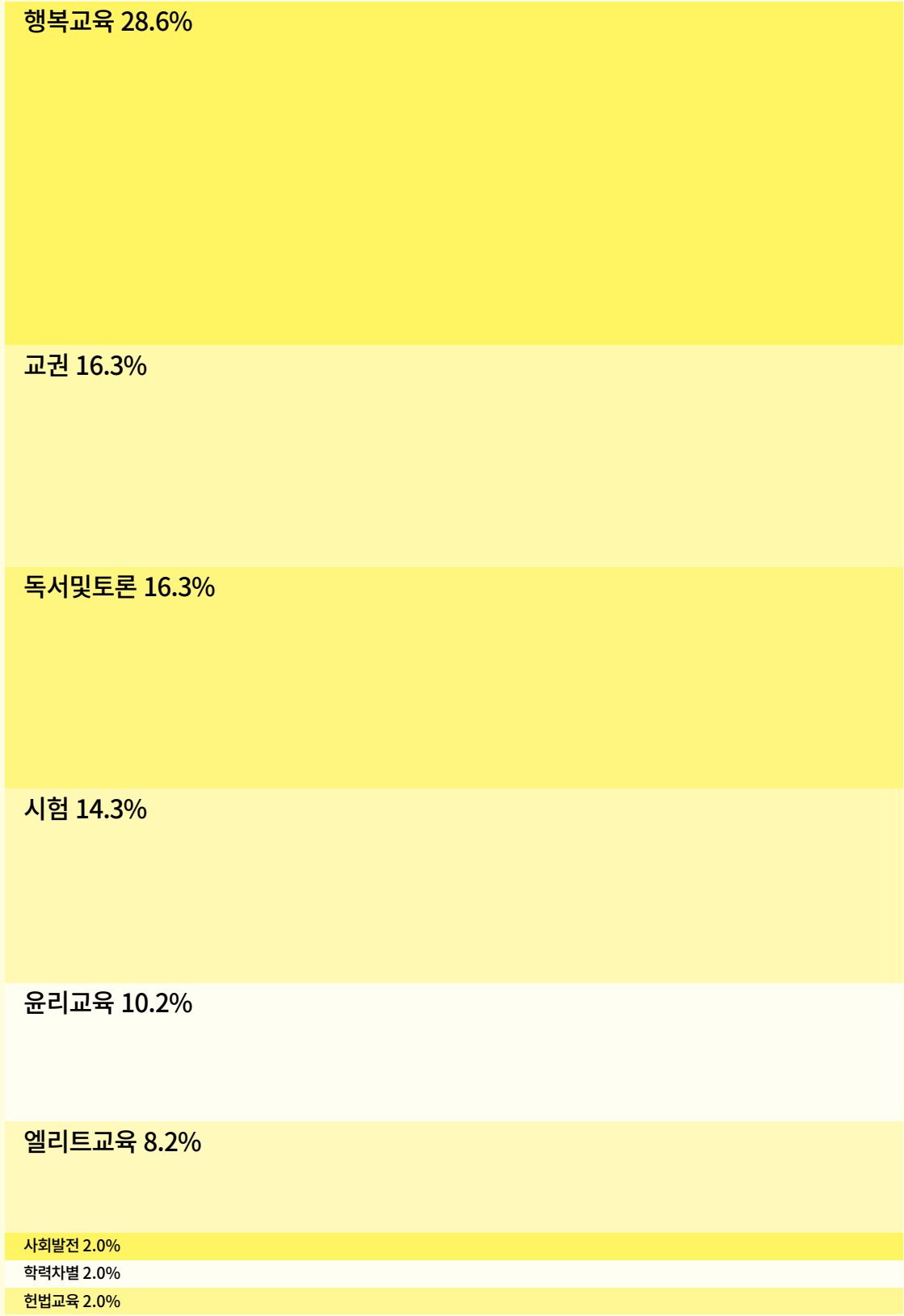
- 인구절벽 시대인데도 왜 우리 아이들은 경쟁은 왜 더 치열해지는 걸까요? (이해인)
-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대학입시가 아닌 꿈일 순 없나요? (윤연정)
- 정답만 찾도록 교육하는 입시제도. 이대로 괜찮을까요? (신승한)

수능 개편

- ‘순종적인 노동자 생산’을 위한 ‘수능’, 이런 한국 교육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최윤지)
- 우리는 왜 아직도 수능에만 올인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나요? (이세현)
- 왜 수능이라는 단일 평가 기준에 젊은이들을 몰아넣는가? (김성빈)

서울대학교

- 국립 서울대학교, 이제는 폐교해야 하지 않나요? (홍순근)



교육 방향 질문 빈도 비율

교육 방향

'교육 방향' 분야의 질문들은 '지금의 교육이 정말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돈 버는 천재는 육성하면서 행복을 만드는 천재는 왜 육성하지 않는 것입니까?" 시민들은 성적과 서열 중심의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과 공동체적 가치, 사고력과 윤리 의식을 기르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복 교육 항목에서는 아이와 교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 배움의 기쁨이 살아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교육 철학의 재정립을 요청하고 있으며, 출신 배경이나 성장 환경이 아이의 가능성을 결정짓지 않도록 하는 포용적 교육을 지향합니다. 교권에 대한 질문들은 교사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담고 있으며,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독서 및 토론, 윤리 교육, 시험 제도 관련 질문들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다름을 이해하고, 실패를 포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교육이 더 이상 지식 암기와 정답 맞히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통, 질문, 성찰 중심의 교육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트 교육과 관련해선 특수 목적 교육의 공정성과 사회적 역할을 되묻고, 사회 발전과 제도 개혁이 교육의 사명 중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지 교실 안의 변화를 넘어, 교육이 어떤 사회를 만들고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시민의 집단적 성찰이며, 사람을 위한 교육, 관계를 위한 배움, 존엄을 위한 제도 설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행복 교육

- 돈 버는 천재는 육성하면서 행복을 만드는 천재는 왜 육성하지 않는 것입니까? (김경숙)
- 선생님도 아이도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없을까요? (김명선)
- 보잘것없는 출신 배경과 폭력적인 성장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과연 그 흔적들을 지워 내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김영훈)

교권

- 왜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죽어 가야 하나요? (이아름)
- 학생 인권만큼 교사 인권도 소중한 것 아닐까요? (이지훈)

독서 및 토론

- 학교에서 교육의 양보다 질이 높아진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지금보다 달라질까? (윤지나)
- 왜 학교에서 수업 중에 양질의 책을 친구들과 함께 꾸준히, 깊이 읽지 못하나? (황기웅)
- 소통 단절을 단순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성회)

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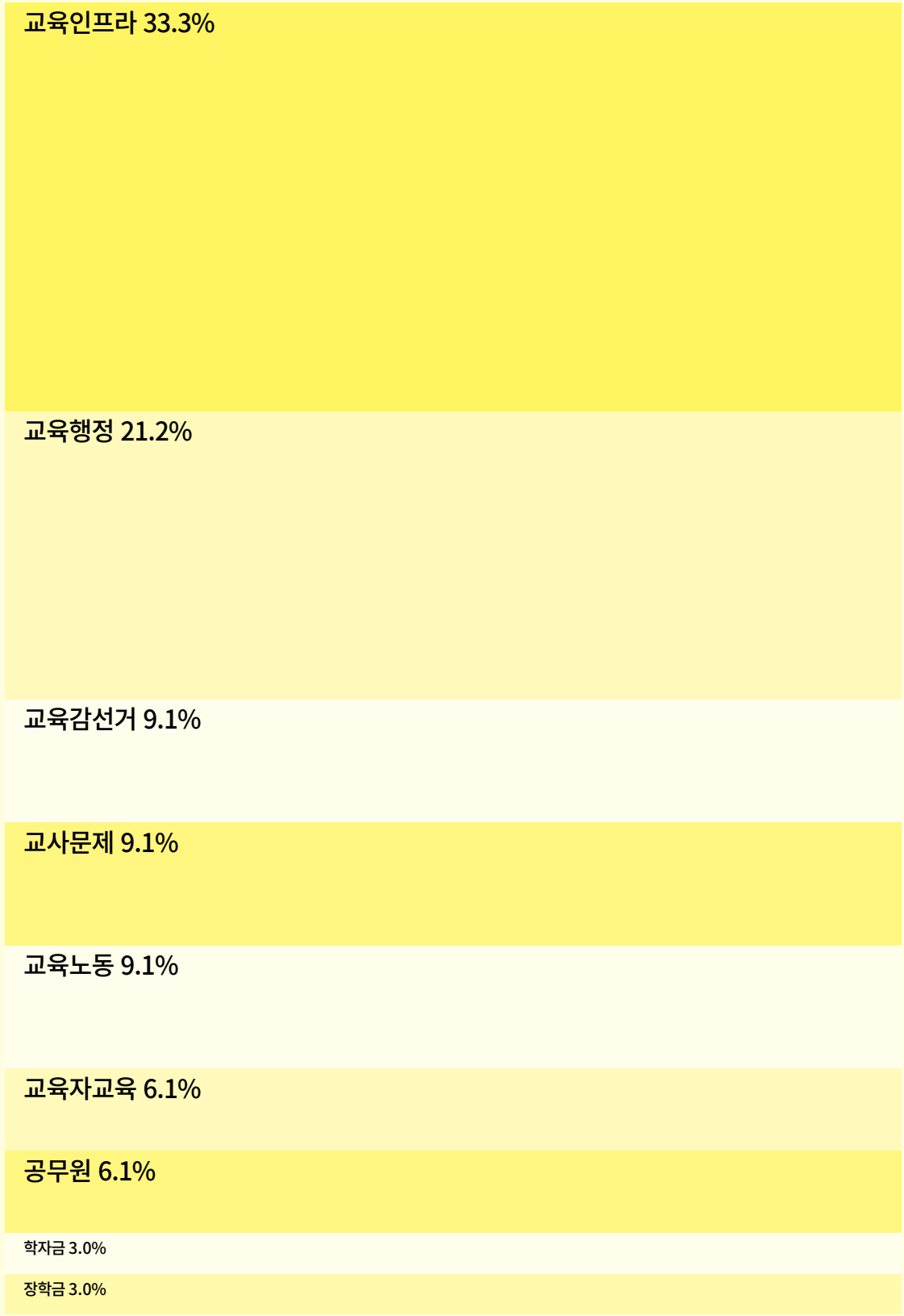
- 왜 100점을 맞아야 할까요? 통과/실패로 처리하면 배움이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김지수)
- 학업에 대한 평가 횟수가 증가하면 학력 수준이 높아질까요? (박길순)

윤리 교육

- 혐오를 사라지게 하는 교육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정은숙)

엘리트 교육

- 우리나라 과학 영재들이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이정석)



교육 행정 질문 빈도 비율

교육 행정

'교육 행정' 분야의 질문들은 교육의 현장과 제도가 아이들의 성장과 교사의 사명을 얼마나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부터 교사 인사, 예산 운영, 장학제도까지 전반에 걸쳐 구조적 개선과 정의로운 분배, 실질적 효율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 관련 질문들은 학교 현장의 물리적 환경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걸맞게 갖춰져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교육 행정 항목에서는 교장·장학사의 승진 관행,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의 타당성, 직책 정년 조정 등 불투명한 인사 시스템과 단순 계산식 행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두드러집니다. 교사 문제와 교육 노동에 대한 질문들은, 교사의 위상 저하, 과도한 행정 업무, 비정규 교원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공감을 드러냅니다. "교사는 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는가?" 교육자 교육 항목에서는 대학 교수 포함 모든 교육자의 자질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재교육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좋은 교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관련 질문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 금지 등 정치적 권리 제한에 대한 문제 제기로, 공직자의 중립성과 기본권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교육'이라는 이상이 현장의 여건과 제도 설계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되묻고 있습니다.

교육인프라

- 학교가 크나 작으나 왜 체육관은 하나일까? (김새롬)
- 공사장 인접 학교의 교육 환경 안전, 이대로 좋은가? (유웅상)
- 왜 초·중·고등학교에 CCTV가 설치되지 않나요? (정우리)

교육행정

- 왜 장학사는 100%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나요? (김경성)
- 초·중·고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가? (장한수)
- 초·중·고교 교장의 직책 정년을 5년쯤 당기면 어떨까요? (김지연)

교육감 선거

- 교육감 선거는 왜 지방 선거와 같이 하나요? (나은영)
- 교육감 선거!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것이 어떨까요? (안정화)

교사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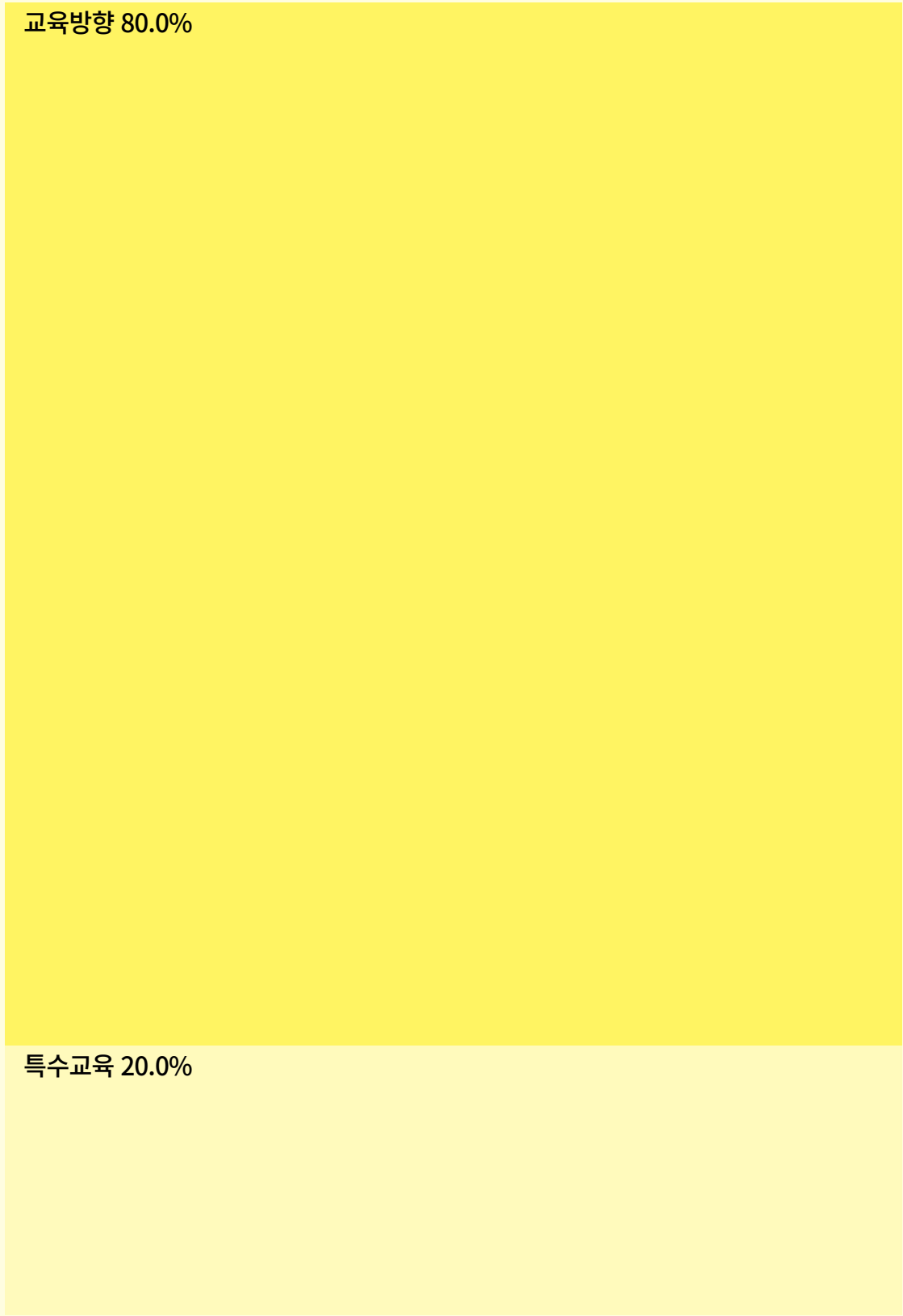
- 되고 싶은 직업 1위가 선생님이었던 건 예전 이야기, 지금 직업 만족도 어떻냐고요? (현운석)
- 학교에서 아이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는가? (김미란)

교육노동

- 교사는 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는가? (박미정)
- 중고등학교 시간강사는 왜 일주일에 14시간까지만 강의해야 하나요? (남정화)

교육자 교육

- 대학교수에게도 교사와 같은 필수 이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종윤)
- 참다운 교육자를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이승호)



교육 개혁 질문 빈도 비율

교육 개혁

‘교육 방향’ 항목에서는 낡은 교육 관행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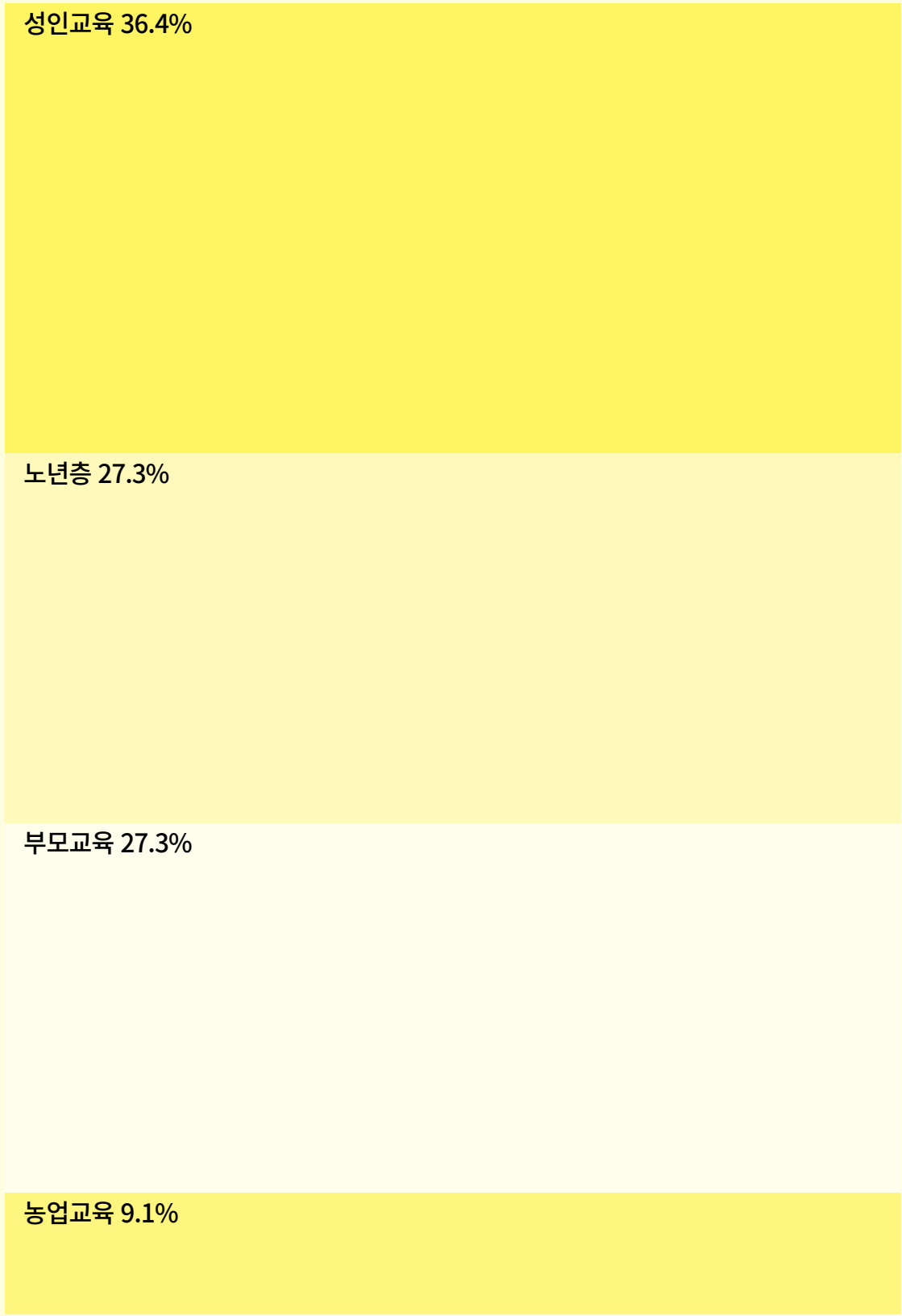
“돌봄 센터의 운영 시간과 서비스 수준이 학교마다 달라 아이 양육이 어렵습니다.” 기후 위기와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환경에 대한 고민, 여학생 교복 규정 같은 일상적 불합리에 대한 개선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시민들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교육 현실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수교육 항목에서는 느린 학습자와 장애아동 등 학습 소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합니다. 인식 개선, 충분한 전문 인력, 차별 없는 교육 접근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평등한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교육 방향

- 돌봄 센터의 운영 시간과 서비스 수준이 학교마다 달라 아이 양육이 어렵습니다. (경민선)
- 학교에서는 정답만 달달 외우게 하는 공부를 시키면서, 왜 학교를 벗어나면 답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걸까요? (조원향)
- 기후 위기와 AI시대의 학교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하유미)
- 아이들에게 비판 의식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 개혁이 필요합니다. (김윤정)
- 왜 추운 겨울에도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어야 할까요 (이지우)
- 국민건강보험은 있는데 국민교육보험은 왜 없을까요? (이승진)
- 초·중·고 동아리(부) 활동을 키울 수 없나요? (김윤규)

특수 교육

- 느린 학습자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은 없나요? (이지은)
- 장애는 다름이고 조금 불편한 것이라는 인식 개선과 충분한 인력 지원 장소가 필요합니다. (윤은주)
- 장애 아동이 보육과 교육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는 정책 수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염희경)



평생교육 질문 빈도 비율

평생교육

'평생교육' 분야의 질문들은 삶의 전 주기에 걸친 배움의 기회를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제도교육이 삶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저출산 시대에 왜 우리는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교육은 왜 부모 의무교육이 없나요? " 부모됨을 위한 교육을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이는 자녀의 권리와 돌봄의 책임을 개인에만 전가하지 않고,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전환적 시선을 보여 줍니다. 성인, 노년층, 부모, 농업인 등 다양한 삶의 단계와 역할 속에서 교육은 단지 학령기 청소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인교육 항목에서는 특히 양육자와 중·장년층 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복지 확대 요구가 두드러집니다. 자녀 교육, 문화 향유, 삶의 재설계에 필요한 교육이 공공영역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저출산·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제2의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한 지역 기반 학습 기회 확대를 요청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 프로그램 부재나 고령 인구 재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합니다. 농업 교육은 농업이 미래 생존과 생태 전환의 핵심임에도 교육의 주류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업 기초교육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은 생태시민 양성 차원의 교육 개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교육의 시기·대상·형식을 확장하여, 교육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삶의 지속가능성을 지지하는 국가적 시스템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요청이며, '배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사회 전체의 학습 생태계를 재설계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성인교육

- 엄마들을 위한 교육 복지가 필요합니다. (이지우)
- 문화강국 대한민국에 노인을 위한 교육과 문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영)
- 저출산 시대에 공공기관에서는 왜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는가? (이원진)

노년층

- 지방에 사는 60대 후반 여성 노동자입니다. 주민센터의 무료 배움 프로그램은 왜 저녁에는 열리지 않을까요? (임순자)
- 55세 이후부터 인생에 대한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합시다. (이현희)
- 저출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고령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유형우)

부모 교육

- 고등학교 정규 과정에 부모 교육을 넣으면 안 됩니까? (이승현)
- 대한민국 교육에는 왜 부모 의무교육이 없나요? (차상현)

농업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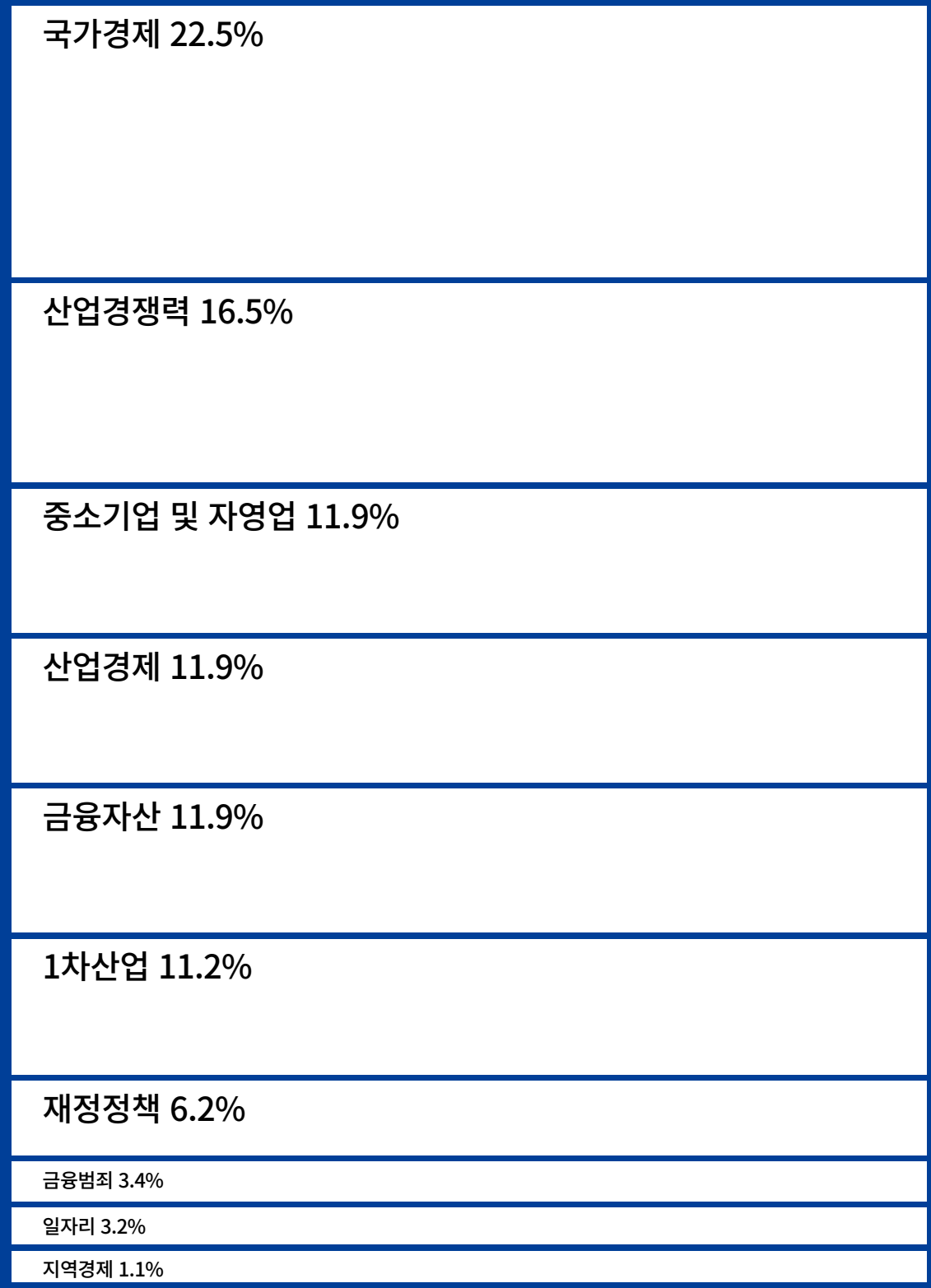
- 농업을 초·중·고 기본교육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윤석신)

경제 및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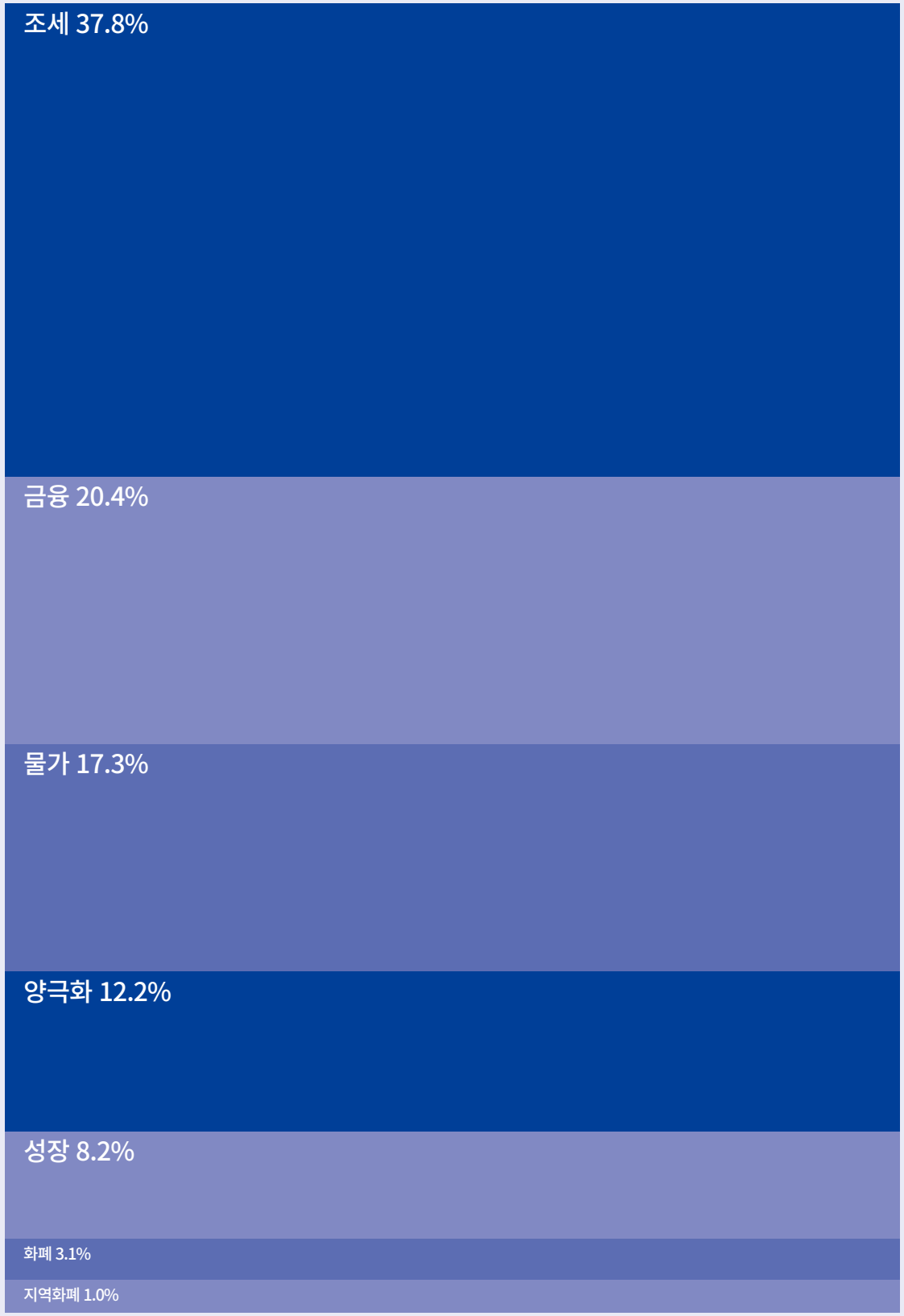
‘경제 및 산업’ 분야 시민 질문은 삶의 체감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통찰과 제도 전환의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가 두드러집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문제의식은 경제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고액 체납자들의 돈을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재정부는 왜 국민의 대의를 실행하는 행정부의 일원으로 보이지 않고 단독적인 이익집단처럼 행동할까요?” “우리나라는 왜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가요?”, “대한민국 주식은 왜 늘 제자리일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양극화에 대한 위기의식도 큽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조·거래 혁신은 한국에서는 어려울까요?”, “배달 앱에 종속되어 가게를 운영하는 현실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왜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없을까요?” 또한 시민들은 한국 산업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묻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생존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영권 세습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지는 않을까요?”

국가경제 영역에서는 조세 정의, 금융 접근성, 물가 안정, 양극화 해소, 지역 균형 발전 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핵심 요구입니다. 산업 경쟁력 영역에서는 성장 동력 고갈, 기업 지배 구조의 비효율, 고용 회피, 소비자 권익 침해 등 산업 전반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시민의식이 드러납니다. 기술 생태계, 인재 육성, 소비자 중심 제도와 예산 효율화가 주요 과제로 언급됩니다. 금융 자산 분야에서는 주식 불신, 대출 격차, 부동산 불안, 가상자산 제도 미비에 따른 자산 형성 기회 박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금융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확대가 요구됩니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 분야에서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생계 위기, 정책 사각지대, 창업 실패의 부담 등을 지적하며, 자립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강조됩니다. 1차산업 영역에선 식량 주권, 농민 기본소득, 농산물 가격 보장, 임업과 지역경제 회복 등 생태적 전환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핵심 이슈로 떠오릅니다. 재정정책 영역에선 예산 낭비와 기재부 권력 집중에 대한 비판, 재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회복 요구가 나타납니다. 금융 범죄 영역에서는 낮은 형량, 피해자 보호 미비, 보이스피싱 문제 등을 통해 금융정의의 실종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재와 피해 회복 중심 제도가 요청됩니다. 일자리 영역에서는 세대 전반을 아우르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노인의 경력 활용, 청년 창업, 기본일자리 도입, 중장년 맞춤형 정책 등이 제안됩니다. 지역경제 영역에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청년 유출, 지역 일자리 부족, 정착 어려움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며, 유연한 노동 구조와 자립적 지역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국 이 질문들은 단일 정책 개선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산업 구조, 공정한 자산 기회, 지속 가능한 성장, 지역 균형이라는 새로운 국가 운영 철학을 묻는 집단적 성찰로 이어집니다. 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시민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경제 및 산업 질문 빈도 비율



국가경제 질문 빈도 비율

국가경제

'국가경제' 분야의 질문들은 세금, 금융, 물가, 화폐, 양극화, 성장 등 국민 삶과 맞닿은 경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작동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 전환과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조세 영역에서는 조세 정의, 고액 체납, 자산 과세 형평성, 세금 조정 등에 관한 공정한 과세 구조에 대한 요구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성실한 납세자만 부담을 지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회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언급됩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금리 격차, 금융소외, 산업 경쟁력 등 공정한 금융 접근권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며, 물가 관련 질문은 유통구조 개선과 생활물가 안정의 실효성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양극화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소득 격차를 넘어 자산, 교육, 지역 간 불평등 해소로 확장되며, 포용적 성장과 사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성장 항목에서는 체감 가능한 성장, 지역균형 발전, 가계부채 등 구조 전환과 정부의 전략적 역할을 묻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설계 필요성과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자립 기반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모든 질문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림살이의 정의'와 '분배의 공정'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경제에서 포용과 균형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민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세

- 왜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의롭지 않을까요? (박영재)
- 국민 형편에 따라 변동하는 세금변동제 도입 가능할까요? (권애임)

금융

- 우리나라도 금융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김정민)
-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금융서비스의 한계를 완화할 수 없나요? (우용철)
- 예금 금리는 계속 내려가거나 동결되는데 왜 대출 금리는 내려가지 않나요? (박영석)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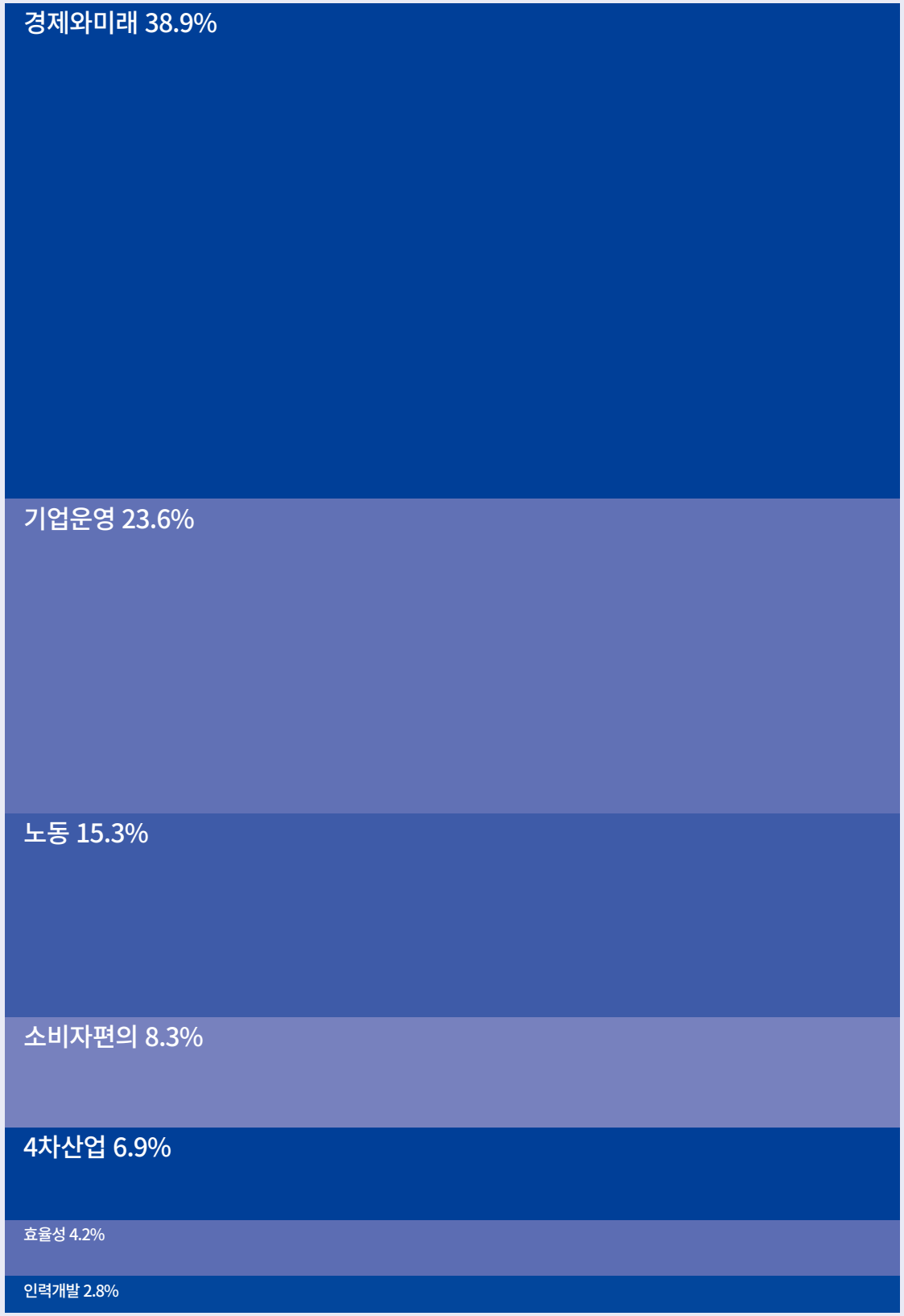
-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 이대로 괜찮을까요? (송태영)
- 왜 한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가지 않지요? (전인현)

양극화

- 부의 불평등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양정인)
-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인수)

성장

- 소비를 줄이면서도 경제성장이 가능할까요?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최준호)
- 가계부채를 디레버리징하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질문 드려요. (강민구)
- 1인 GDP 3만 6024달러가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dangdangkim-sm1gc)



산업 경쟁력 질문 빈도 비율

산업 경쟁력

'산업 경쟁력' 분야의 질문들은 경제 성장, 기업 구조, 기술 혁신, 고용, 소비자 권익, 행정 효율성, 인재 육성 등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시민들의 문제의식과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들은 단순한 지표를 넘어 산업이 사회에 어떤 책임과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정체, 성장 동력 고갈,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시민들은 화폐·이윤 중심의 기존 경제 패러다임에서 지속 가능성과 공존 중심의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선 족벌 경영, 비효율적인 승계, 능력보다 혈연을 우선시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 미래 성장 전략이 강조됩니다. 노동 부문에서는 청년 고용 절벽, 비정규직 문제, 획일적인 채용 방식 등에 대한 구조적 개편과 노동 존중 문화 정착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첨단산업단지, 지산학연 협력 등 4차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선제적 산업 전략과 협업 모델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소비자 편의 항목에선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복잡한 서비스 해지, 온라인 소비 환경 제약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등장하며, 효율성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예산 낭비 방지, 공공 부문 생산성 제고가 강조됩니다. 인재 육성에 있어서는 국내 인재 투자, 민관 협력 기반 전략 수립 등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사람'이라는 인식이 반영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기술이나 효율성 향상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윤리, 책임, 공정성을 아우르며, 산업 경쟁력을 국가 전체의 총합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를 보여줍니다.

경제와 미래

- 우리는 언제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류 국가가 될 수 있나? (신혁)
- 성장 동력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미래는? (장창웅)
- 나락으로 빠진 국가경제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윤태영)

기업 운영

- 경영권 세습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한국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을까요? (송재경)
- 유능하지도 않은 재벌을 유지해야 하나요? (이승훈)

노동

- 고용을 늘리려 하지 않는 기업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광현)
- 기업들의 채용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나요? (강다운)

소비자 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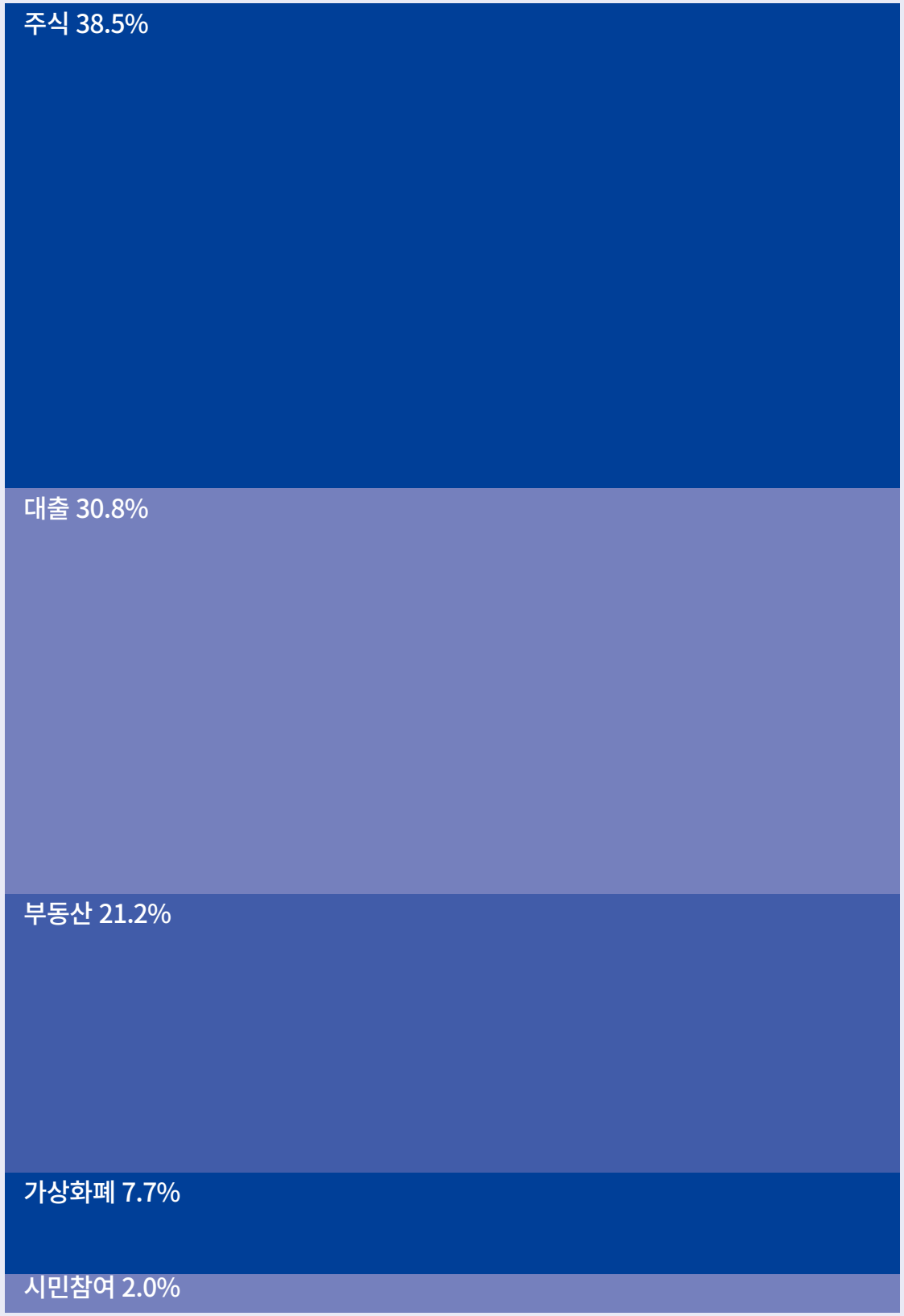
- 통신이나 신용카드 약정을 해지하는 게 왜 이렇게 번거로워야 하는 것일까요? (김민승)
- 해외카드, 왜 온라인몰에서는 못 쓸까요? (재외국민 - 허영란)

4차산업

-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이현규)

효율성

-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박경진)



금융자산 질문 빈도 비율

금융자산

'금융자산' 분야의 질문들은 자산 형성과 관련한 불신, 불공정, 배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제도 개선과 참여 기회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주식·대출·부동산·가상자산 등 주요 수단들이 불균형한 시장 구조와 정책 미비 속에서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중심에 있습니다. 주식 영역에서는 조작 처벌 미비, 저평가, 투명성 부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며,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대출 분야에서는 서민 접근성 부족, 고리대출, 비대면 금융사기 등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이 드러나며,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이 요구됩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은 가격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대출 부담, 외국인 역차별 이슈 등을 중심으로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가상자산 영역에서는 제도적 준비 부족,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활용 저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신기술에 대한 공공적 수용 방안이 논의됩니다. 시민 참여 영역에서는 공공 프로젝트에 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등장하며, 이는 자본 참여 확대라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시사합니다.

결국 시민들은 금융자산을 투기 수단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린 성장 기반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

- 우리나라는 왜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가요? (김지혁)
- 대한민국 주식은 왜 늘 제자리일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지연)
-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투명하지 않다고 느껴질까요? (장준석)

대출

- 왜 서민들은 대출받기가 힘들까요? (양소정)
- 정부는 왜 대부업체를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나요? (김세진)
- 비대면 대출 사기 근절 방법이 있을까요? (방가영)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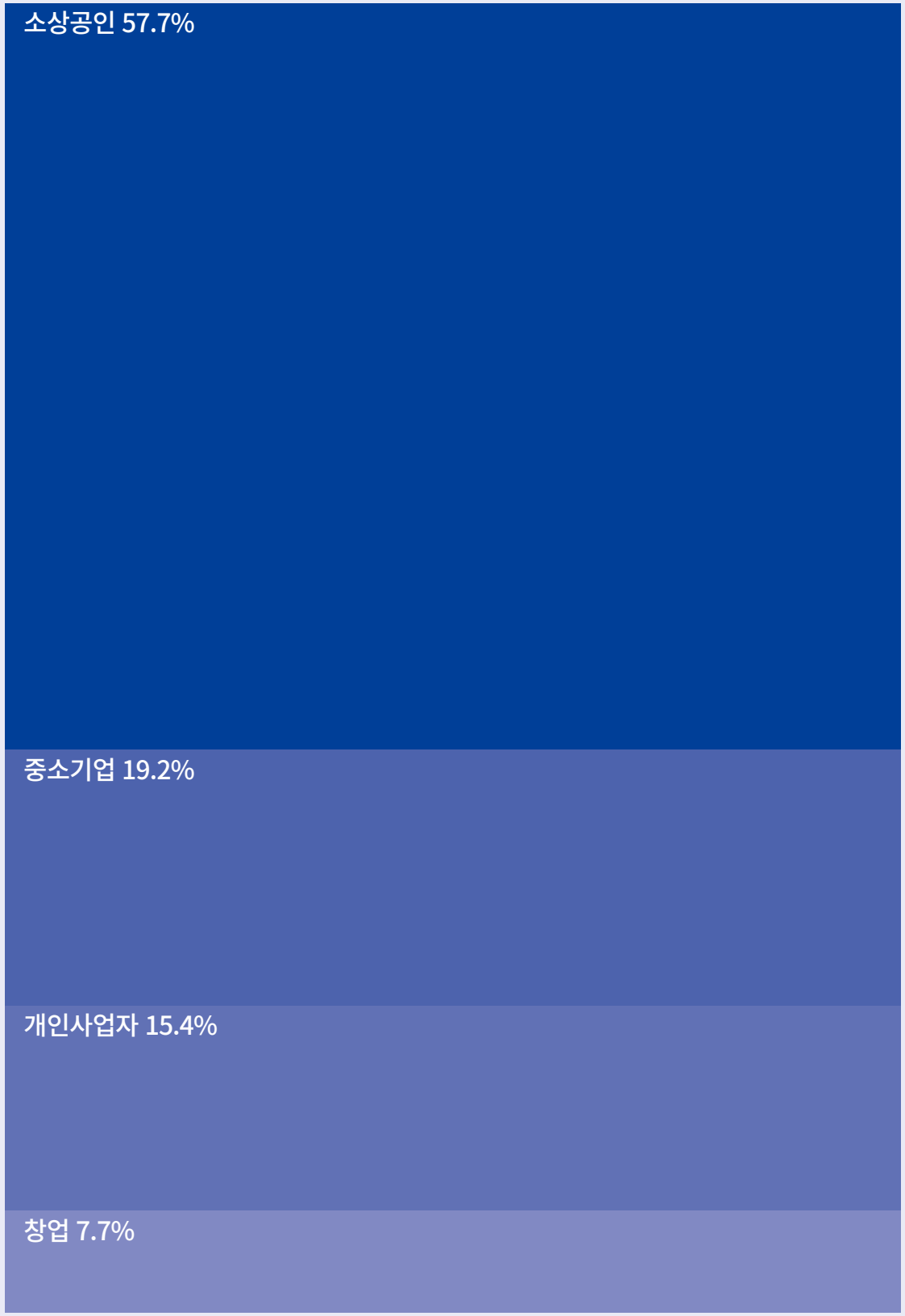
- 아파트 가격의 안정적인 관리는 가능한가요? (지민우)
- 부동산 광풍 흐름 속에서 대출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부담을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할까요? (김범석)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과 부동산시장 왜곡 가중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박성남)

가상화폐

- 우리는 크립토 패권의 시대에 대비하고 있나요? (최혜경)
- 왜 제로페이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나요? (정숙자)

시민 참여

- 국가주도 사업에 일반 시민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상품을 개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장준영)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질문 빈도 비율

중소기업 및 자영업

'중소기업 및 자영업' 분야의 질문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처한 현실과 생존을 위한 정책 개선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항목에서는 장시간 노동에도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 배달 플랫폼 의존, 만성적인 부채와 자금난 등으로 무너진 생계 기반을 복원할 수 있는 안전망 마련이 강조됩니다. 중소기업 관련 질문에서는 대기업과의 격차, 임금과 노동조건의 불균형, 불공정 거래 구조가 지적되며, 이를 해소할 제조 생태계 혁신과 산업 간 상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들은 실효성 없는 대출 중심 지원, 보호 제도의 부재, 사회 안전망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4일제와 같은 변화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폐업률이 높고, 실패 후 재기가 어려우며, 특정 업종에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생계 유지가 아닌, '스스로 일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회복은 재정·제도·심리적 복원력 확보와 함께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 소상공인 살아갈수 있을까요? (이병철)
- 배달 앱에 종속되어 가게를 운영하는 현실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노기필)
- 왜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부채에 허덕이며 영업 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이명진)
- 자영업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을 벌지 못하나요? (장영신)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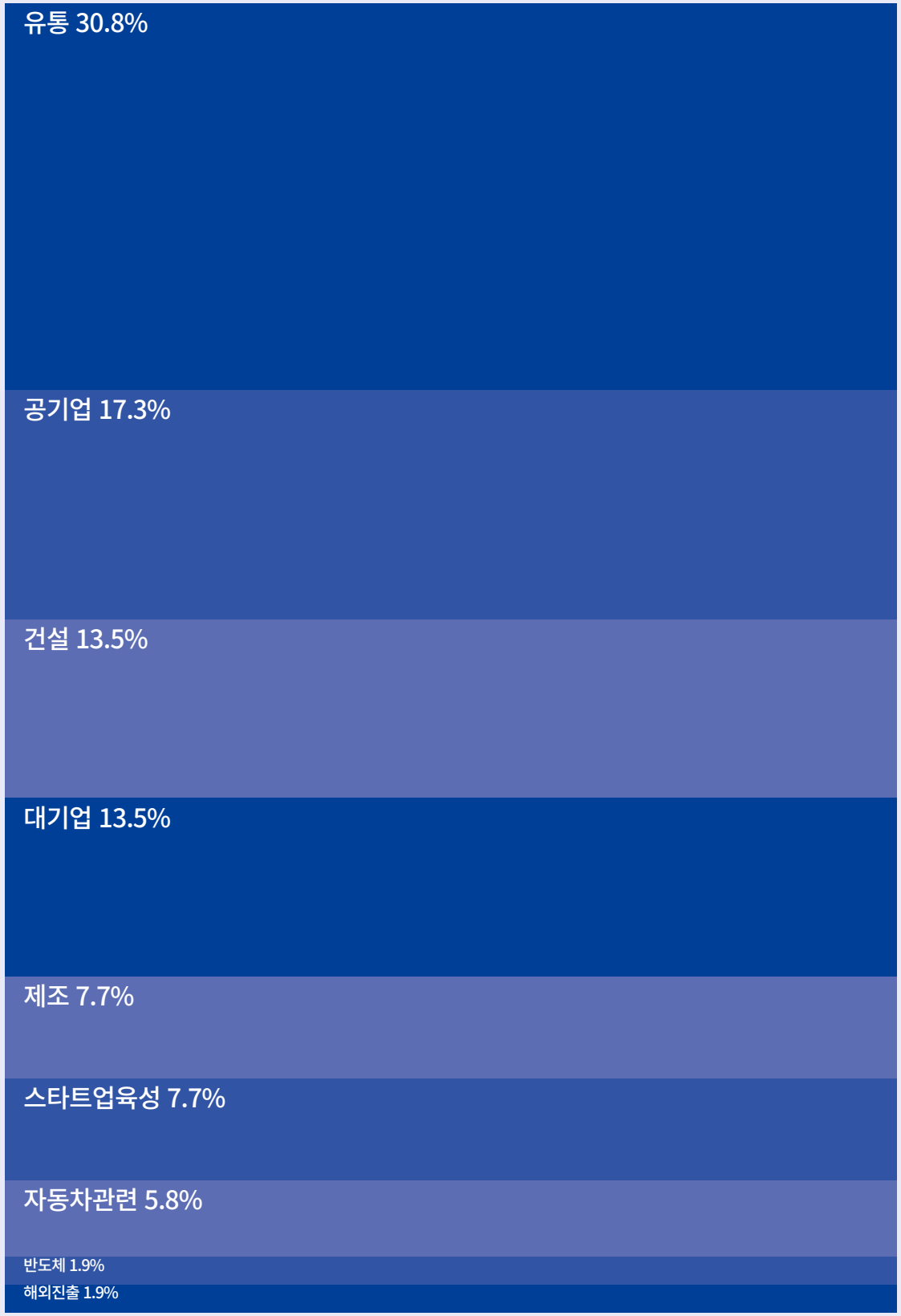
- 대기업과 중소기업, 현대판 신분제인가? 노동 격차 해소 방법은? (노건호)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조 거래혁신은 한국에서는 어려울까요? (최종면)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왜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을까요? (송효종)

개인사업자

- 자영업자(유튜버)를 위한 필수 기초 교육 제도 유무? (조성택)
- 왜 자영업자들 지원 사업은 대출뿐인가? (정유경)
- 주4일제 근무를 하면 개인 사업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며 개인 사업자를 위한 정책은 있나요? (김미화)
- 4050대 자영업자의 소리, 정작 우리가 힘들 땐 나라는 무얼해줬나요? (김선정)

창업

- 외식업의 높은 폐업률, 본질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현우)
- 대한민국에서 창업 실패하면 왜 재기가 어려울까? (김영열)



산업경제 질문 빈도 비율

산업경제

'산업경제' 분야의 질문들은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불균형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유통 부문에서는 복잡한 구조, 과도한 마진, 농수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이 지적되며, 구조 단순화와 공공성 강화가 강조됩니다. 공기업은 방만한 경영, 비효율적 인사와 형식적 채용 등으로 공공성과 전문성의 균형이 과제로 제기됩니다. 건설 산업은 최저가 낙찰제, 하청 구조, 안전 미흡 등 구조 개편과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기업 관련 질문은 플랫폼 독과점, 하청 불공정 거래 등 불균형을 비판하며, 공정한 시장과 상생을 촉구합니다. 제조업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디지털 전환과 기술 융합을 통한 재도약 전략이 요구됩니다. 스타트업은 실패 낙인과 재도전 한계, 글로벌 진출 장벽을 지적하며, 도전과 회복이 가능한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소비자 보호와 환불 제도 등 권익 중심 정책이 강조되며, 반도체는 산업 다변화 필요성이, 해외진출은 국내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제안으로 이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은 산업 간 격차와 구조적 문제를 넘어서, 공정·혁신·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경제 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통

- 롯데, GS, 신세계, 농협 등 물류·유통 업계의 위기는 무엇으로 부터 시작되었나? (차성훈)
-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은 최적화되지 못할까요? (허철)
- 중간유통업자로 인해 비싸지는 물가는 잡을수 없나요? (노학성)

공기업

-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언제까지 국민이 참아야 할까? (김영열)
-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은 블라인드가 맞을까? (홍창효)

건설

- 한국의 건설 품질을 어떻게 높이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정금희)
- 건설업 최저가입찰. 하청구조 괜찮은가? (공진세)

대기업

- 프랜차이즈 본사가 업주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요? (민동우)
- 배민, 쿠팡 등 대기업의 독과점은 해결할 수 없나요? (정종필)

제조

-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는 없는 건가요? (엄기문)

스타트업 육성

- AI 시대를 위한 스타트업 성장 지원은 무엇일까요? (한승호)
- 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은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하지 못 할까요? (송무복)

자동차 관련

-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김동인)
- 자동차 관련 법들은 왜 소비자 편이 아닌 제조사 편인가? (최윤선)

1차 산업 질문 빈도 비율

1차 산업

'1차산업' 분야의 질문들은 농업, 임업, 어업 등 기초 산업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 부문에서는 식량 자급률, 작물 유통 구조, 공정한 가격 보장, 농민 기본소득 도입, 농협의 공적 역할 회복 등 현장 중심의 정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의 미래를 단순히 생계 산업이 아닌 국가안보와 기후 대응의 핵심 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방경제 관련 질문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농산어촌의 구조적 소득 부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자생적 산업 육성 필요성을 지적하며, 지방의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발굴과 자립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 전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특히 임업과 농어업 분야의 정책 사각지대, 구조적 부채 문제, 제도적 차별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온 임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1차산업이 단순한 생계 기반 산업이 아닌, 식량 안보와 지역 회복, 생태 전환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 전환을 촉구하며, 농어민·임업인 중심의 공정한 정책 설계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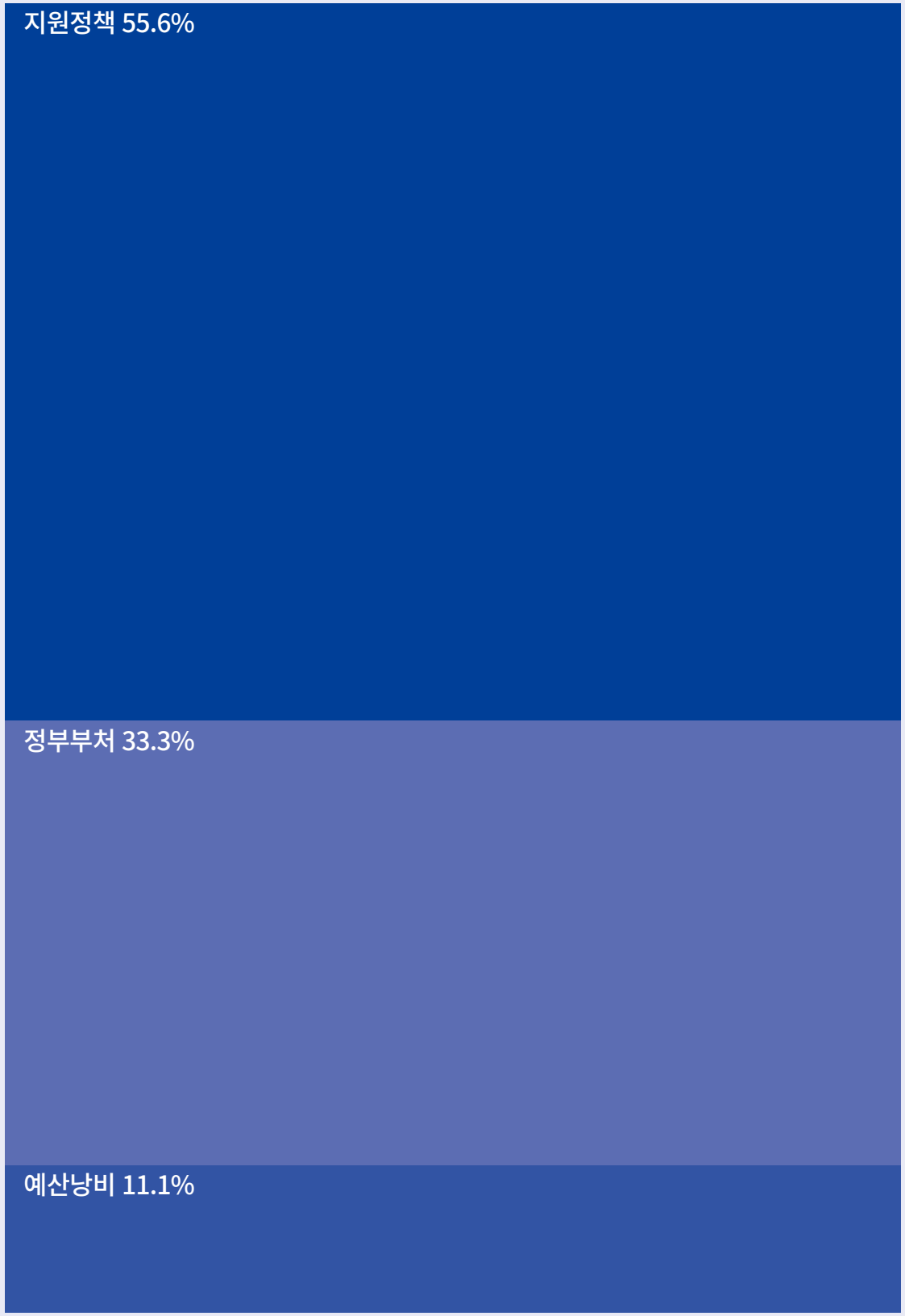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한가요? (김희숙)
- 농민도 자신이 키운 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나요? (김태욱)
- 미래의 농업,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강헌희)
- 농민 기본소득제를 만든다면? (송경진)
-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농협의 공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요? (김효기)

지방경제

- 대한민국은 수도권을 블랙홀로 만들어 모든 지방을 소멸하게 만드는가? (문준필)
- 낙후된 지역과 지방에, 산촌과 농촌에 소득원을 늘릴 방법이 있는가? (엄용결)

1차산업

- 농어민들의 문제들 중 핵심 중 하나는 결국 부채입니다. 해결책으로 최소한 김대중 대통령의 해법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도완영)
- 임업은 언제까지 차별받아야 하는 겁니까? (이상귀)
- 임업 현안에 대해 왜 임업만 침묵하나? (이승재)



재정 정책 질문 빈도 비율

재정 정책

'재정 정책' 분야의 질문들은 국가 예산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 재정이 진정으로 국민과 산업을 위한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정책 관련 질문에서는 공공 연구기관 확대, 민간기업의 실질적 지원 방안, 외국인 투자자 및 창업자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어집니다. 단순한 보조금이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제도 설계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부처, 특히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권한이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우려, 국민 대의보다 독자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관료 중심 구조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조직 간 견제와 균형, 민주적 재정 운영 방식의 정비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에 대한 질문들은 공공 재정이 투입된 대형 사업이 실패하거나 부실한 결과를 내는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국민 세금의 사용처와 성과 간 단절, 성과를 공유하지 못하는 세금 기반 투자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회의와 분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가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성과 공유 구조의 정립 필요성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국가 재정은 누구를 위해, 어떤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에 기반한 재정 시스템의 재설계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보여줍니다.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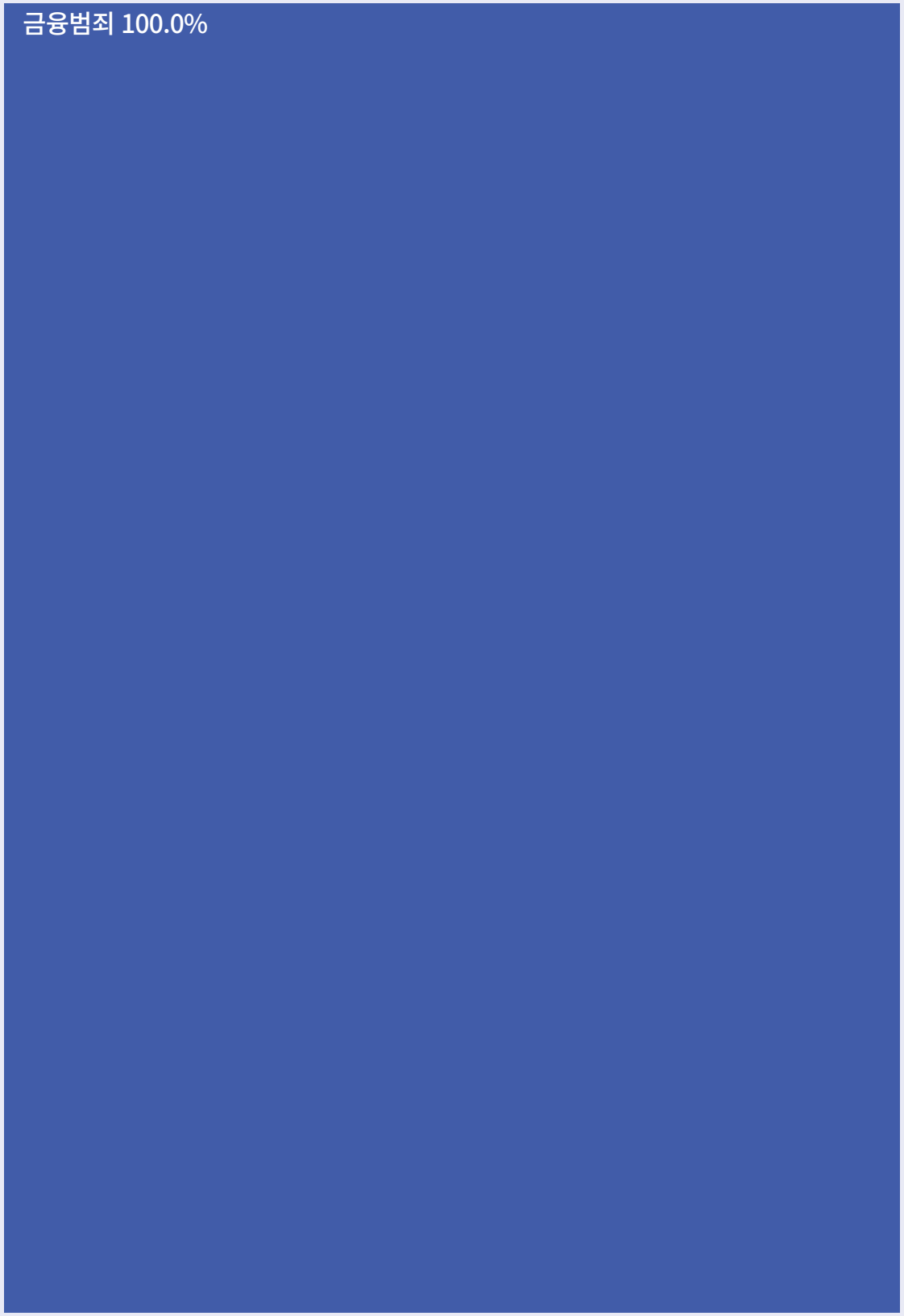
- 국책 또는 공공의 과학 또는 기술 '연구소'를 추가 하거나 확대하고 민간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호창)
-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윤아)

정부부처

- 기획재정부는 왜 국민의 대의를 실행하는 행정부의 일원으로 보이지 않고 단독적인 이익집단처럼 행동할까요? (김유숙)
- 기재부의 권력이 너무 큰 거 아닐까? (조성태)

예산낭비

- 대왕고래 프로젝트 하이리턴이라면 국민 세금 쓰지 말고 직접 투자하고 리턴 받으면 되지 않나요? (강현정)
- 40년 경영에 원금손실 93% 이게 경영입니까? (홍석환)
- 세금으로 자란 사업이 성공했을 때 왜 나는 기뻐할 수 없는가? (송용근)



금융 범죄 질문 빈도 비율

금융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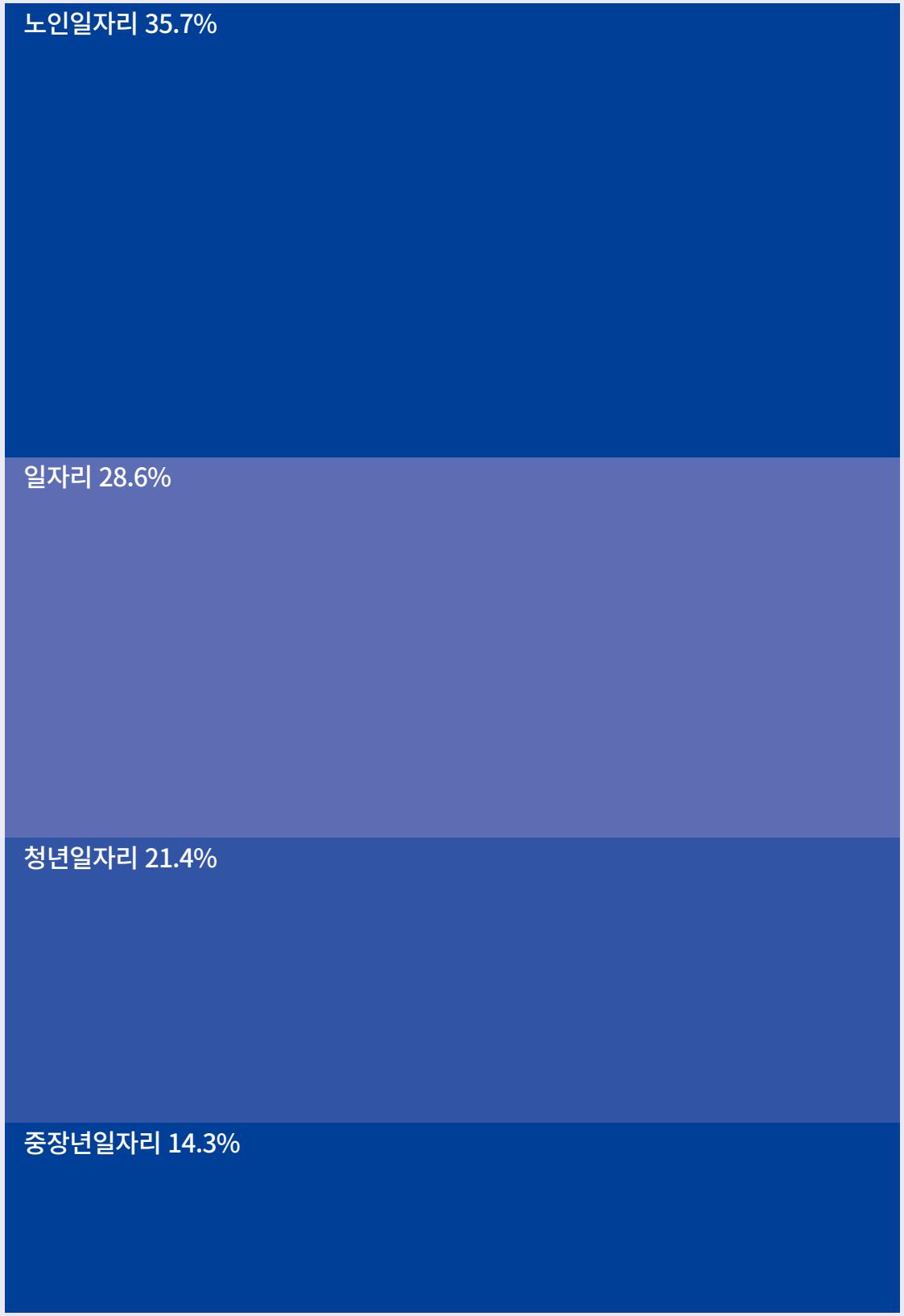
'금융 범죄' 분야의 질문들은 보이스피싱, 기업 불법행위, 경제사범의 솜방망이 처벌 등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금융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특히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다른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 기업 불법행위로 인한 과징금이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정부에 귀속된다는 점, 보험·대출·보이스피싱을 위장한 스팸 전화 및 문자에 대한 근절 대책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우리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 환경을 누가,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금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피해 회복 중심의 제도 개선, 디지털 환경에 맞춘 예방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

- 경제사범 형량이 왜 타 위법에 비해 가볍나요? (김재억)
-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왜 피해자가 아닌 정부로 귀속시키나요? (송현)
- 자본주의에 반하는 경제사범의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를 강화합시다. (김용구)
- 보험, 대출, 광고, 보이스 피싱 등의 스팸 전화와 문자를 근절 할 수 있을까요? (방가영)
- 금융투자를 가장하여 도박을 일삼는 시장교란한 자들이 망하면 파산면책해주는것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권태우)
- 경제 사기꾼들의 처벌은 왜 약한가요? (김일환)



일자리 질문 빈도 비율

일자리

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세대별로 상이한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며, '고령층'부터 '청년층', '중장년층'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통합적 노동정책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에 대해 시민들은 은퇴 이후에도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고령층의 경험과 역량이 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지 묻고 있으며, 퇴직 노인의 지혜와 기술이 사회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과 연계한 기본일자리 정책에 대한 제안과 함께, 경제활동 연령의 기준 및 노동 생애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관한 관심은 특히 높아, 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스라엘처럼 벤처생태계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청년 취업 문제를 국내에 한정하지 말고 글로벌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질문은, 중년 세대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3050세대가 노년과 청년 사이에서 고립되지 않고, 경력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생애주기형 일자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처럼 '일자리'는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세대별 삶의 조건과 맞닿아 있는 다층적인 문제로, 시민들은 보다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정책을 통해 각 세대가 존엄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 퇴직 노인의 값진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까요? (신정원)
- 중년이나 노인들의 경험과 기술 지식은 왜 버려져야 할까요? (김나현)

일자리

- 청년들이나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으려면 어떤 문제들이 협의되고 해결돼야 하는가? (최문성)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기본소득이 있으면 기본일자리도 있어야 해요. (김학귀)
- 경제활동 연령은 언제까지 일까요? (임영규)

청년 일자리

-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울까? (이창기)
- 청년세대가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가 활성화된 이스라엘과 같은 연구개발중심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호창)
- 청년 취업문제를 왜 국내에서만 해결하려 하나요? (심은영)

중장년 일자리

- 3050대의 중년층, 즉 허리나이대에 대한 정책과 노인복지(노인 일자리등)에 대한 생각들이 궁금합니다. (이아르미)
- 노인층 젊은층의 실업 및 창업 등의 지원은 많은데 중장년층은 왜 이리 없는지? (손진호)

지역경제 질문 빈도 비율

지역경제

지역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노동환경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왜 지방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지, 그리고 이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처럼 매년 수만 명의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청년들이 생계비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에 정착해야 하는 현실, 수도권에 몰린 기회와 자원이 지역에는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 그리고 최근의 근무 형태 변화 속에서도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가 지역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노동환경의 분산적 재설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결국 시민들은 수도권 중심의 고용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에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지역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삶, 국가의 균형 발전, 사회적 지속가능성 전반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노동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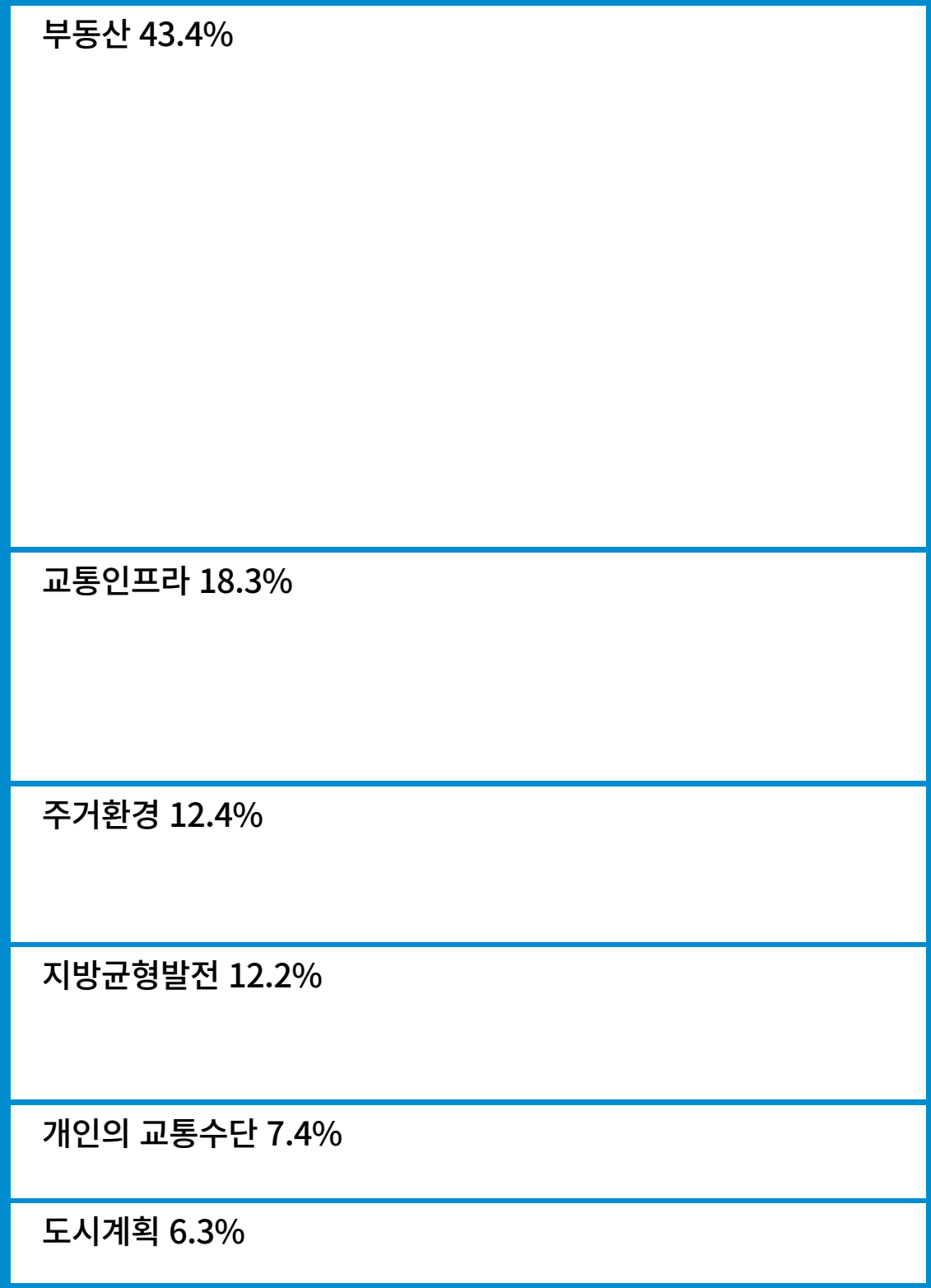
- 왜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없을까요? (이범렬)
- 부산은 왜 매년 2만명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나요? (오용섭)
- 경기 북부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김재원)
- 왜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을까요? 왜 지방 출신 청년들은 비싼 월세를 내면서 서울에 살아야할까요? 왜 재택 근무는 정착되지 않을까요? (이승하)

도시 및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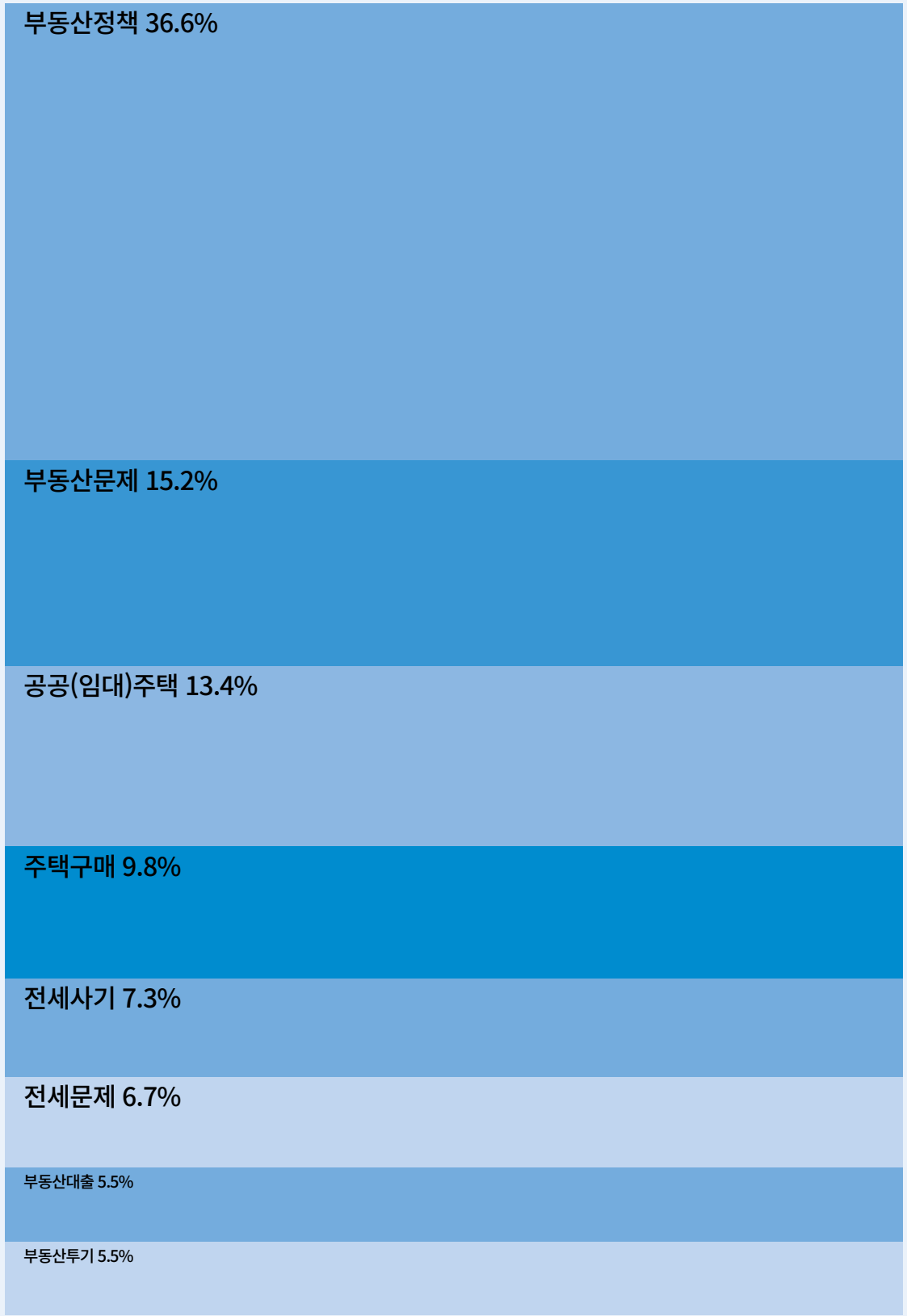
‘도시 및 주거’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단순한 공간 불만을 넘어, 삶의 질, 이동권, 안전, 균형 발전 등 도시 전체의 철학과 구조를 묻고 있습니다. 왜 부동산정책과 주택정책은 사람을 위하지 않는가?가 맨앞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버는 돈의 대부분은 집에 묶이는 건가요?” “한 사람이 100채의 집을 소유해도 괜찮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언제쯤 어떻게 뭘 해야 해결이 될까?”

부동산 영역에서는 실수요자 중심 정책, 공급 과잉 해소, 공공임대의 형평성 개선, 갭투자·전세사기 근절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개편이 요구됩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이 실수요자 보호인지 투기 수단인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정한 대출·조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통 인프라에선 인도 부재, 빗길 차선 미비, 대형차 규제 부족 등 안전 문제와 인프라 격차가 지적되며,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집니다. 공공교통은 수도권 중심의 편의성에 비해 비수도권 접근성은 열악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국 통합 시스템 구축이 요청됩니다. 신호등 기능 활성화는 교통 약자와 안전에 직결된 정책 실행력의 문제로 제기됩니다. 주거환경에서는 아파트 분양, 건설 원가, 층간소음, 플래카드, 오토바이 소음 등 실생활 불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강조되며, 공공 개입의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도시환경과 전력정책, 기피시설 입지 문제, 공기질·싱크홀 등은 안전한 주거 인프라에 대한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주제로 확장됩니다. “서울에서만 5년간 957건, 싱크홀 문제 정말 안전한가요?” 지방균형발전에선 수도권 집중 완화, 의료 인프라, 빈집 재생 등 지방 정착 기반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며, 지방이 국가 존속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반영됩니다. 개인의 교통수단 분야에선 주차난, 충전 인프라 부족, 전동기기 관리 미비, 자전거의 교통수단화, 교통사고 제도 정비 등 개인 이동권 보장이 시민권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에선 하자 아파트, 산업재해, 신도시 교통망 부실 등이 제기되며, 도시의 물리적 확장보다 운영 체계의 공공성과 안전성 강화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공유됩니다.

시민들은 도시정책이 공간 설계에 그치지 않고, 권리와 책임의 재정의, 윤리성과 공공성 회복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기 위한 공간’에서 ‘살 만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총체적 성찰입니다.



도시 및 주거 질문 빈도 비율



부동산 질문 빈도 비율

부동산

'부동산'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단순히 집값의 높고 낮음을 넘어, 주거권 보장, 실수요 중심 정책 수립, 그리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회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부동산 제도 전반에 존재하는 사각지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지적하며, 일관된 방향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의식도 강하게 드러납니다. 미분양 주택의 증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다주택 보유에 따른 자산 편중 등은 단순한 시장 현상을 넘어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 품질의 하락, 입주 대상의 공정성 부족, 지역 간 배치의 불균형 등 제도 운영 전반의 신뢰 회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택구매에 있어서는 높은 집값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접근이 어렵다는 현실과 함께,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특히 주거 안정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이슈로, 시민들은 형량 상향과 함께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대출제도, 예컨대 전세자금대출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 상가 보증금 미반환 문제, 저리 금융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은 실효성 있는 금융정책의 수립을 촉구하는 배경이 됩니다.

결국 시민들의 이 같은 질문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불만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사는 집'이 '사는 삶'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구조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이자, 주거를 인간다운 삶의 권리로 되돌리려는 목소리입니다.

부동산 정책

- 출생율이 떨어지는데 왜 집을 계속 짓나요? 수십 년 후 이 집에 살 인구가 있나요? (이다영)
- 건물 공실에 세금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황대용)

부동산 문제

- 1가구 1주택자들의 사각지대나 고충을 덜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민유선)
- 한 사람이 100채의 집을 소유해도 괜찮은가? (임완섭)
- 언제쯤 서민들도 내집을 가질수 있을까요? (황정은)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특별법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법인지 의문입니다. (양성중)
- 공공주택 청약 조건은 합당한가요? (한경아)

주택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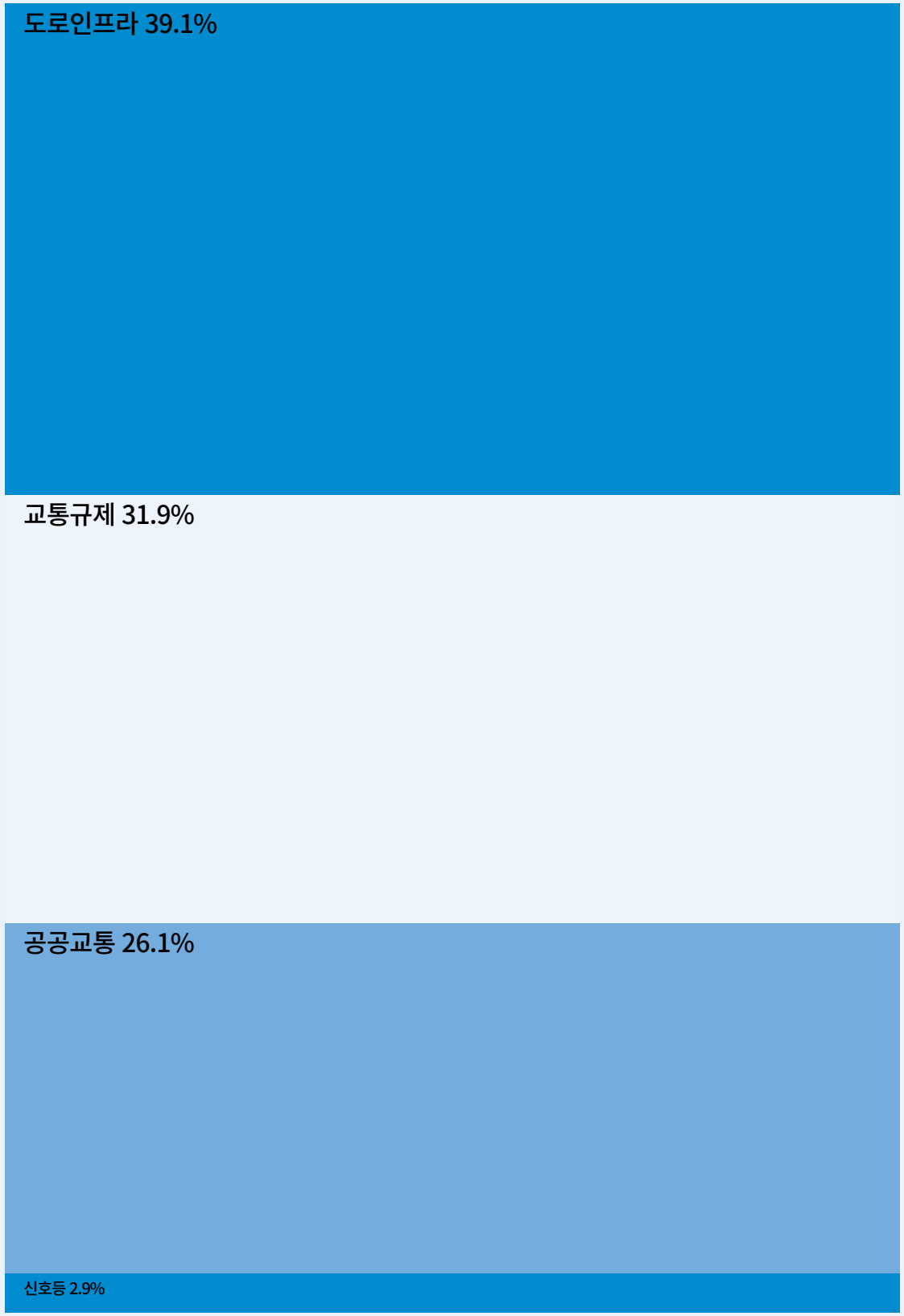
- 주택 구입의 기회는 공정한가? (김태성)
- 현재의 집값은 구입 가능한 가격일까요? (염진태)

전세사기

- 전세사기범 들의 형량을 중범죄로 다스리게 법으로 재정해주세요. (염성식)

전세문제

- 전세 계약 문제가 있는 경우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옳은가? 전세 계약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이중윤)
- 일반 국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주거문제, 전세금·공시지가 연동 제안해요. (염현호)



교통 인프라 질문 빈도 비율

교통 인프라

'교통 인프라'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일상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 환경의 불편과 개선 요구를 담고 있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합니다.

도로 인프라에서는 시골마을의 인도 부재나 비 오는 날 차선 사라짐 등 보행자 안전과 인프라 질적 불균형이 지적됩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 격차와 교통 약자 배려 부족을 드러냅니다. 교통 규제에서는 보행자 우선 원칙 미이행, 대형차량의 위험 운전, 과적 기준의 문제 등이 지적되며, 시민들은 처벌 강화와 제도 현실화, 사회적 약자 중심의 교통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공공 교통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접근성에 비해 외곽과 지방의 교통망 부족이 문제로 떠오릅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카드 시스템에 비해 지역 간 이동의 번거로움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시민들은 공정하고 차별 없는 교통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신호등 관련 질문에서는 시각 알림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기술적 설치뿐 아니라 유지 관리와 운영 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질문들은 교통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안전, 접근성, 공정한 자원 배분을 반영하는 사회적 기준임을 보여주며, 시민들은 균형 잡힌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도로 인프라

- 왜 시골마을에는 차도만 있고 왜 인도가 없을까? (백철)
- 비오는 날 사라지는 차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민주당 정권하에서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유민)
- 보도블럭이 오히려 걸어다니기 더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김미경)
- 고속도로 요금지불을 하이패스로 일원화해주세요. (임도영)
- 대한민국 기간산업 인프라 구축에 민자고속도로 외국인 자본 대신 연기금 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훈섭)

교통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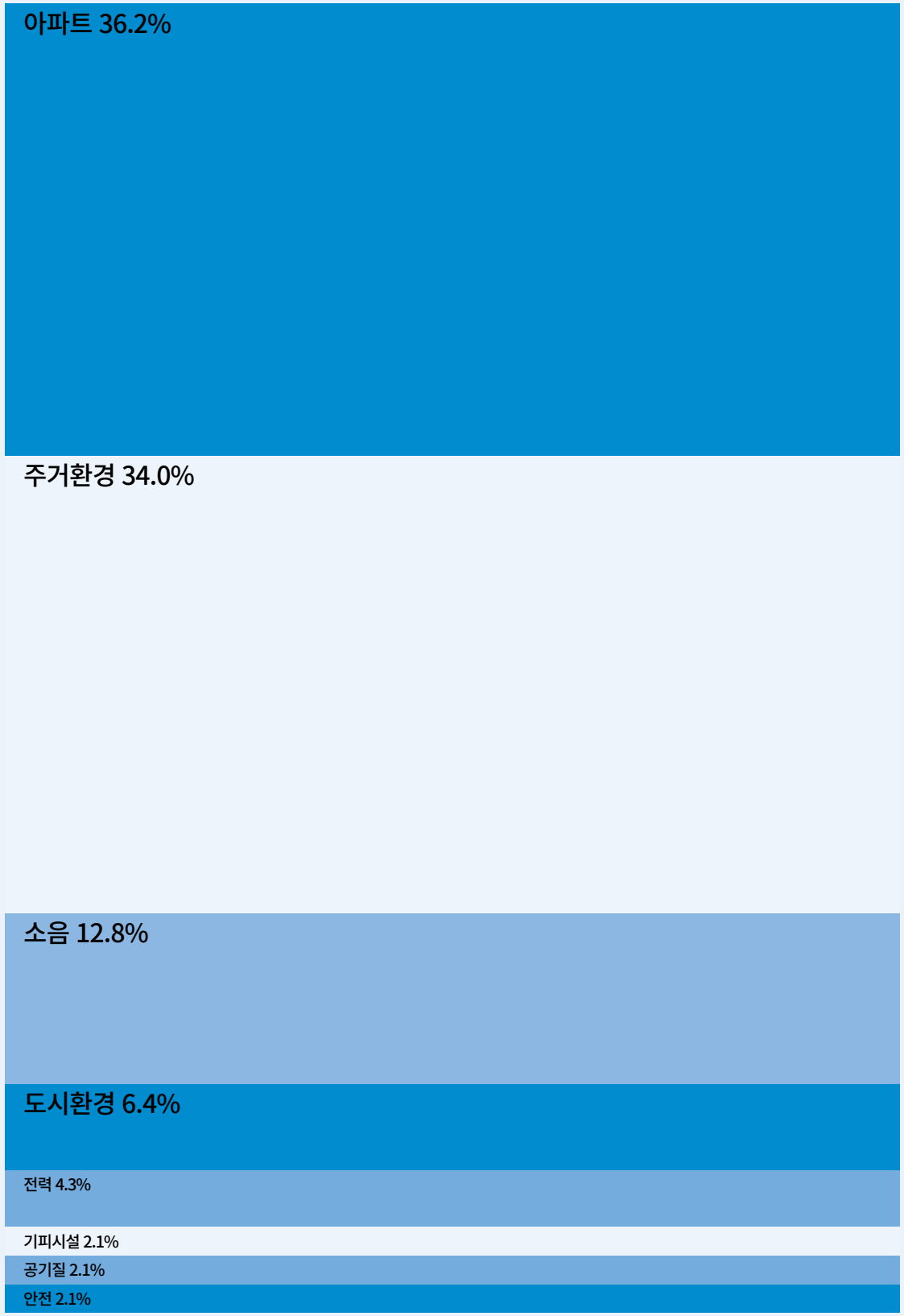
- 보행자 우선의 도로교통체계 확립,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기영)
- 도로위의 무법자인 대형차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지형)
- 세림이법 같은 안전 관련법은 왜 느슨하게 운용하나요? (최용준)
- 미성년자 킥보드 사용할수 없는 근본적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진구)
- 지금 과적 단속 기준 현실을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조은미)

공공교통

- 서울 지하철을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없나요?(박찬식)
- 서울처럼 교통카드 한 장만 가지고 다닐 수 없나요? (김세진)
- 왜 동두천 연천행 1호선은 운행차량이 몇십년째 증차되지 못하는 건가요? (김영호)
- 공공 킥보드는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요?(정윤현)
- 왜 우리 동네는 마을버스가 생기지 못하는가? (김남준)

신호등

- 신호등 시각알림을 만들어 놨는데 왜 사용을 안하지? (박용진)
- 신호등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는가? (윤동진)



주거 환경 질문 빈도 비율

주거 환경

'주거환경'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단순한 주택 소유를 넘어, 일상의 안전·쾌적함·공공성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아파트 분양 방식, 건설 원가 공개, 재건축 기준, 입찰 비리 등은 주거 공간의 공정성과 신뢰를 되묻는 질문들로, 아파트를 소비재가 아닌 공적 자산으로 보는 인식을 드러냅니다. 층간소음, 오토바이 소음, 플래카드 난립, 공공주택 내 안전 부족 등 생활 속 불편은 제도적 개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택 화재보험 의무화, 층간소음 방지법 제정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 경관을 훼손하는 시각 오염에 대한 규제 요구도 있으며, 이는 도시 공간을 공동의 미적 자산으로 인식한 결과입니다. 전력 문제는 탄소중립 대응, 심야 전력 수급 안정에 대한 장기 전략 마련을 촉구합니다. 교도소·군공항 등 기피시설에 대해서 공공성과 지역권익 간 균형 있는 입지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실내 공기질 관리, 싱크홀 등 지반 안전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주거를 개인 선택이 아닌 생존 기반, 즉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정책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 왜 아파트는 30년이 지나면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합니까? (한겨레)
- 아파트 분양은 왜 선분양으로 해야만 하나요? (이상준)
- 왜 건설사 아파트 원가 공개를 하지 않는거죠? (주우정)
- 공사입찰 등의 아파트 비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재도)

주거환경

- 왜 공공주택의 무책임한 층간소음을 법으로 금지하지 못하나요?(김영호)
- 플랜카드 좀 그만걸면 안되나요? (이석민)
- 주택 의무 화재보험가입법을 제정하면 안될까? (신동호)

소음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언제쯤 어떻게 뭘 해야 해결이 될까? (오은희)
-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심한데, 소음 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없나요? (김성민)

도시환경

- 거리에 넘쳐나는 비방 현수막을 제한할 수 없나요? (최진아)
- 길거리 도시미관을 해치는 플랑카드나 현수막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박찬식)

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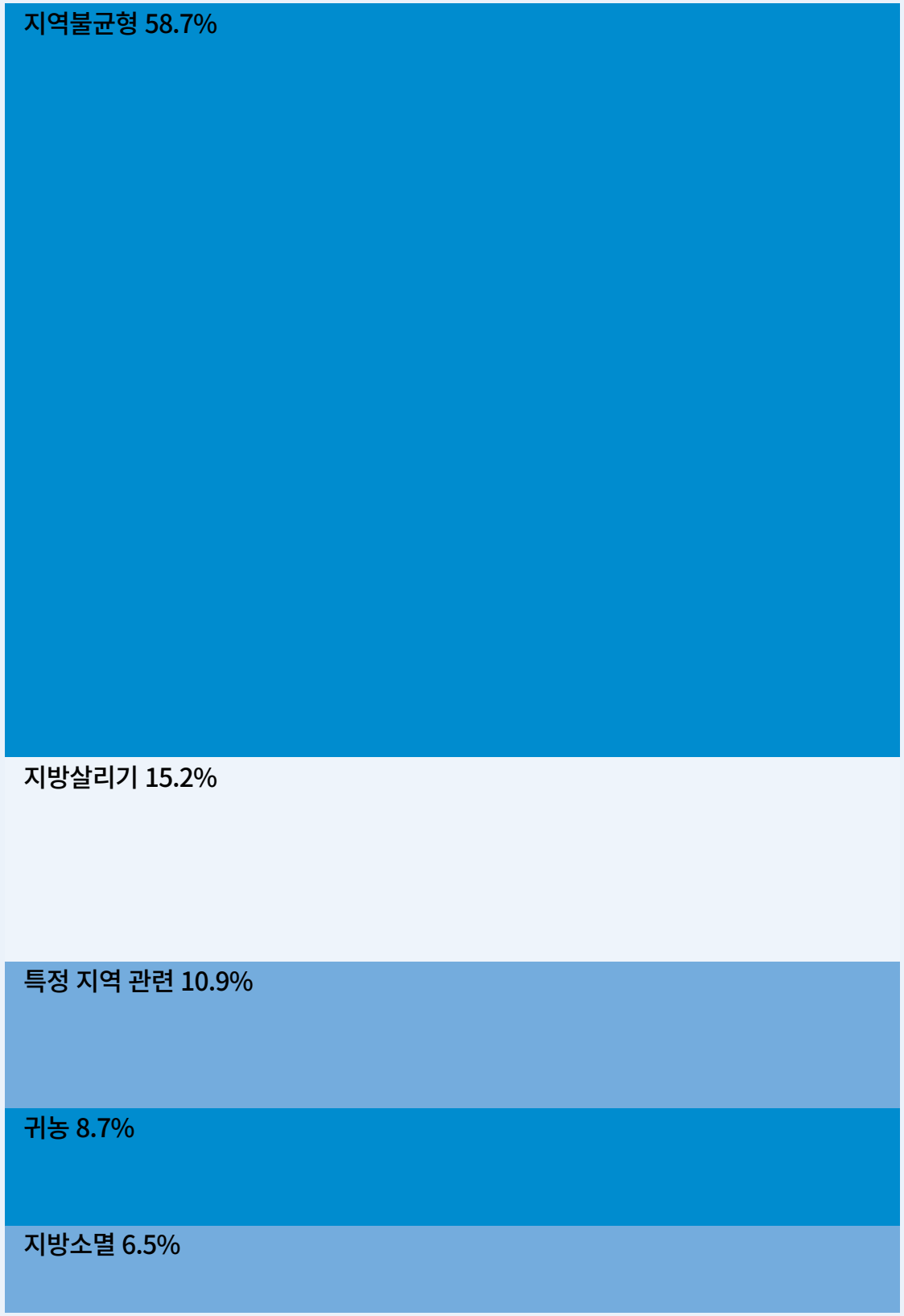
- 심야에 부족한 전기를 충당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안입니다. (은준기)
- 장기 전기 구성 방향성 전략 수립 방안이 필요합니다. (안병혁)

기피시설

- 교도소 군공항 등 기피시설 어디에 둬야하나? (김영환)

공기질

- 다중이용시설 공조기 점검 및 관리를 법적으로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완진)



지방균형발전 질문 빈도 비율

지방균형발전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닌, 삶의 조건과 존엄, 미래 가능성의 분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라는 이중 위기를 넘어서 지방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공통적으로 제기됩니다.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는 인구·경제 중심의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킬 지속가능한 국토 전략, 지방 인프라 확충, 빈집 재활용, 이주 정착 지원 등 근본적인 삶의 기반 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옵니다. '충북 보은' 같은 사례는 인구 기준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행정 중심이 아닌 정서·문화 기반의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수도권 내 불균형, 귀농·귀촌의 장벽, 지역별 정책 정보 부족 등도 함께 언급되며, 등도 함께 언급되며, 지방을 '모험이 아닌 삶의 선택지'로 만들기 위한 통합 플랫폼과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습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에 있어서 시민들은 말뿐인 대책을 넘어서 지역 단위의 실질적 인구 유지 전략과 책임 있는 정치·행정 실현을 요구합니다.

결국, 지방균형발전은 도시-농촌 격차 해소를 넘어 "어디서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중앙집중형 모델에서 지방 주도, 시민 참여형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지역 불균형

-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 집중을 분산시켜 지방과의 상생발전 및 도시/농촌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어떤 국토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할까요?(방성정)
- 지방 폐가를 살리고 이주자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살고 싶지만... 가장 큰 망설임의 이유는 병원입니다. (김미정)
- 10년 후 우리마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선희)

지방살리기

- 인구소멸 위험 1순위인 충북 보은을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김귀옥)
- 인구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과 지원, 약자와 지방은 뒷전입니다. (서진희)

특정 지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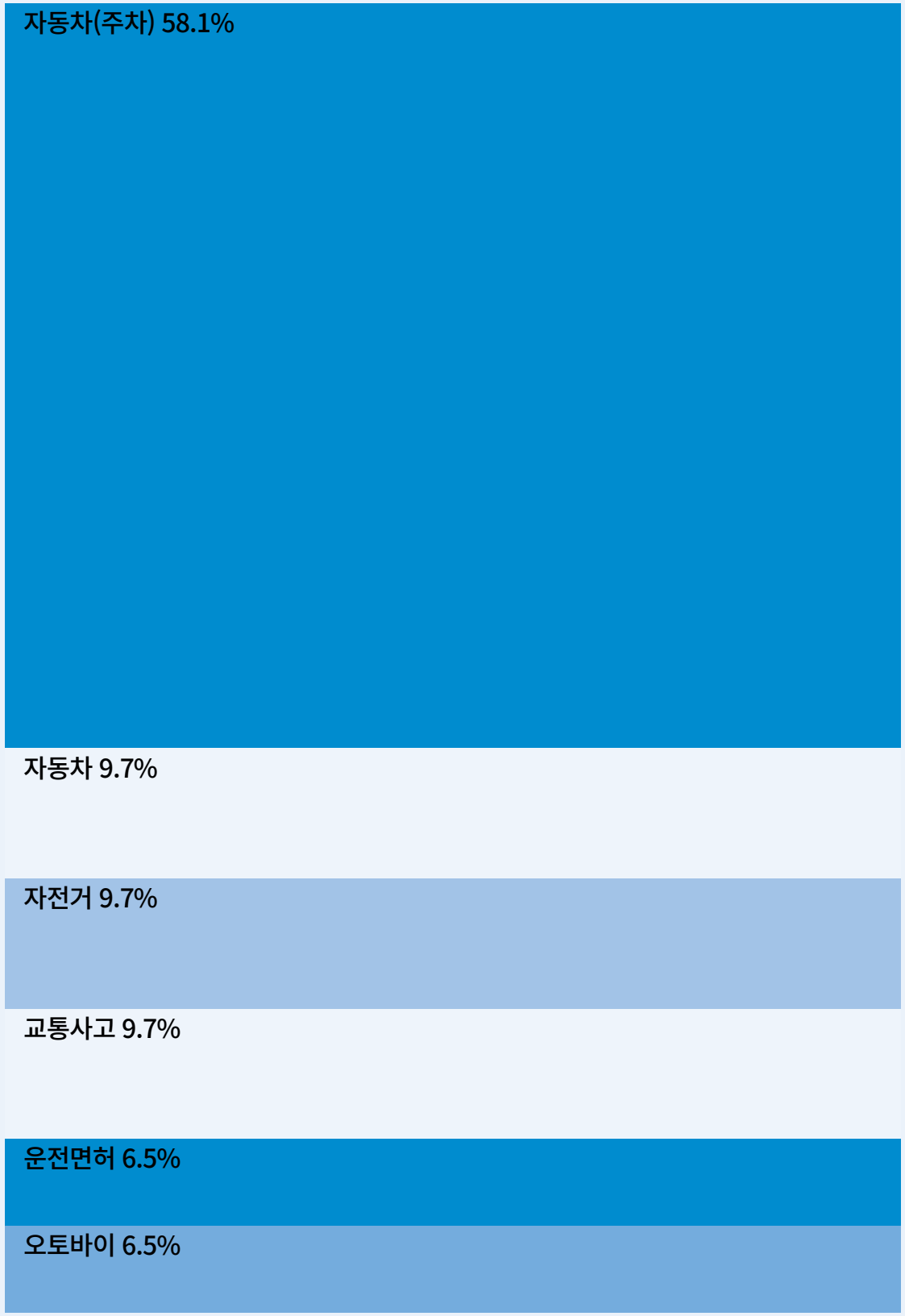
- 수원 군공항은 언제 이전 할까요? (김기웅)
- 왜 경기도 양평은 이리 낙후 돼 있는 걸까요? (김태희)
- 한강의 랜드마크로 문화공간으로서의 인도교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박찬식)

귀농

- 귀촌 지원 정책을 지자체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 만들 수 있을까요? (박용채)
- 청년들의 시골살이 도전이 좀 더 쉬워질 수는 없을까요? (박지민)

지방소멸

- 지방 소멸 대책을 현실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석)
-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 혹은 군, 면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당 지역 인구를 늘이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승용)



개인의 교통수단 질문 빈도 비율

개인의 교통수단

'개인의 교통수단'에 대한 시민 질문은 이동의 자유와 안전을 위한 구조적 개선 요구로 요약됩니다. 주차, 자동차, 면허, 이륜차, 자전거, 교통사고 등 모빌리티 전반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시 기능 저해와 보행자 안전 위협에 대해, 시민들은 주차공간 부족과 관행을 개선할 법적·행정적 대책을 요구합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관련해선 지역 간 충전 인프라 불균형과 졸음쉼터 등 장거리 교통망의 미비가 지적됩니다. 운전면허 제도에선 전기이륜차 등 신형 이동수단에 맞춘 번호판 의무화와 시험 제도 현실화 필요성이 언급됩니다. 오토바이 관련 질문들은 번호판 위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배달 사고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과 단속 체계 정비를 촉구합니다.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인프라와 안전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도심 내 스마트 자전거도로 구축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해선 기존 법제의 현실성 부족과 피해자 중심 보호, 가해자 책임 강화 요구가 반복됩니다.

이처럼 시민들은 이동권과 교통 환경의 공정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동의 정의'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차)

- 도시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차난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요? (정영준)
- 불법주정차는 할 수 없도록 법 개정 요청드립니다. (박지연)

자동차

- 졸음쉼터에는 왜 전기차 충전기가 없나요? (김철규)

자전거

- 우리나라 도심의 자전거도로를 더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허정수)
- 도시에 왜 자전거가 필요할까요? (박규희)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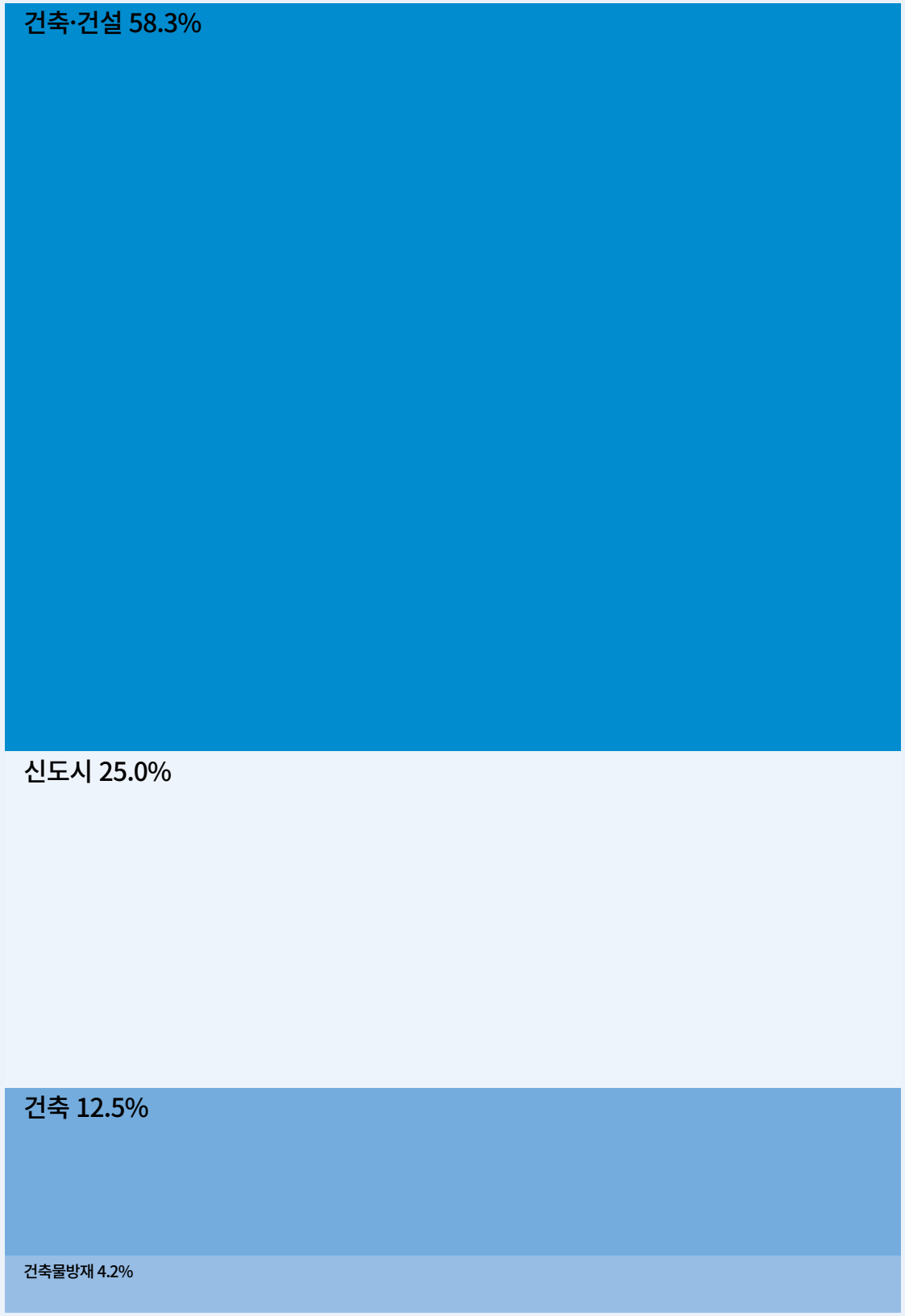
- 교통사고 특례법 개정을 바랍니다 (한승진)

운전면허

-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전동기기에 왜 번호판이 필수가 아닌가요? (이강준)
-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 필수 정답 항목 적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강준)

오토바이

- 오토바이 번호판은 앞에 있을 수는 없나요? 초등학교 앞 신호등을 그냥 지나쳐 가서 질문합니다. (이선희)
- 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과 급증하는 이륜차 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성훈)



도시계획 빈도 질문 비율

도시계획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도시 공간의 안전, 공공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물리적 기반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요구로 요약됩니다.

건축·건설, 신도시, 건축, 방재 등 각 항목은 도시를 이루는 기본 구조와 그 운영 방식에 대한 현장 중심의 불신과 개선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건설에 대한 질문에서는 믿고 살 수 없는 하자 있는 아파트, 반복되는 화재 사고,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안전 리스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짙게 드러납니다. 신도시 항목에서는 새로운 도시를 계속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과 함께,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통망, 행정구역 등 시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인프라가 왜 빠지거나 미비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물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공공성과 안전,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사회적 기반임을 전제로, 법령 정비(예: 건축법 시행령), 국토정보 인프라의 정확성, 측량 오류 등 세부 행정과 기술 시스템의 신뢰성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방재와 관련된 질문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기준과 자재 선택, 법제 설계, 대응 체계 전반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건축물 화재 시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 손실은 자재 안전성의 문제이자 제도적 허점이라는 점에서,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 설계 철학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됩니다.

이처럼 '도시계획' 관련 질문들은 단지 하드웨어적 설계나 미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과 안전, 공정한 공간 배분, 기술과 법의 신뢰 회복 등 도시 전체의 운영 철학을 다시 묻는 것이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향한 시대적 전환 요구로 읽힙니다

건축·건설

- 왜 믿고 살 수 있는, 하자 없는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는가? (김성빈)
- 왜 한국 건축물 화재 시 유독 가스로 인명 손실이 반복되나요? (김만영)
- 산업안전, 건설안전에 대한 질문, 사업주의 처벌만 더 강화하면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현수)

신도시

- 신도시를 계획할때 대중 교통망을 미리 계획하고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서비스는 고려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기남)
- 신도시는 계속 만들어야 할까요? (조종례)

건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 있는 건축물_수돗물 음용률 확대 제안 (지완진)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하동지사의 엉뚱한 측량으로 맹지가 되었습니다 (장천석)

건축물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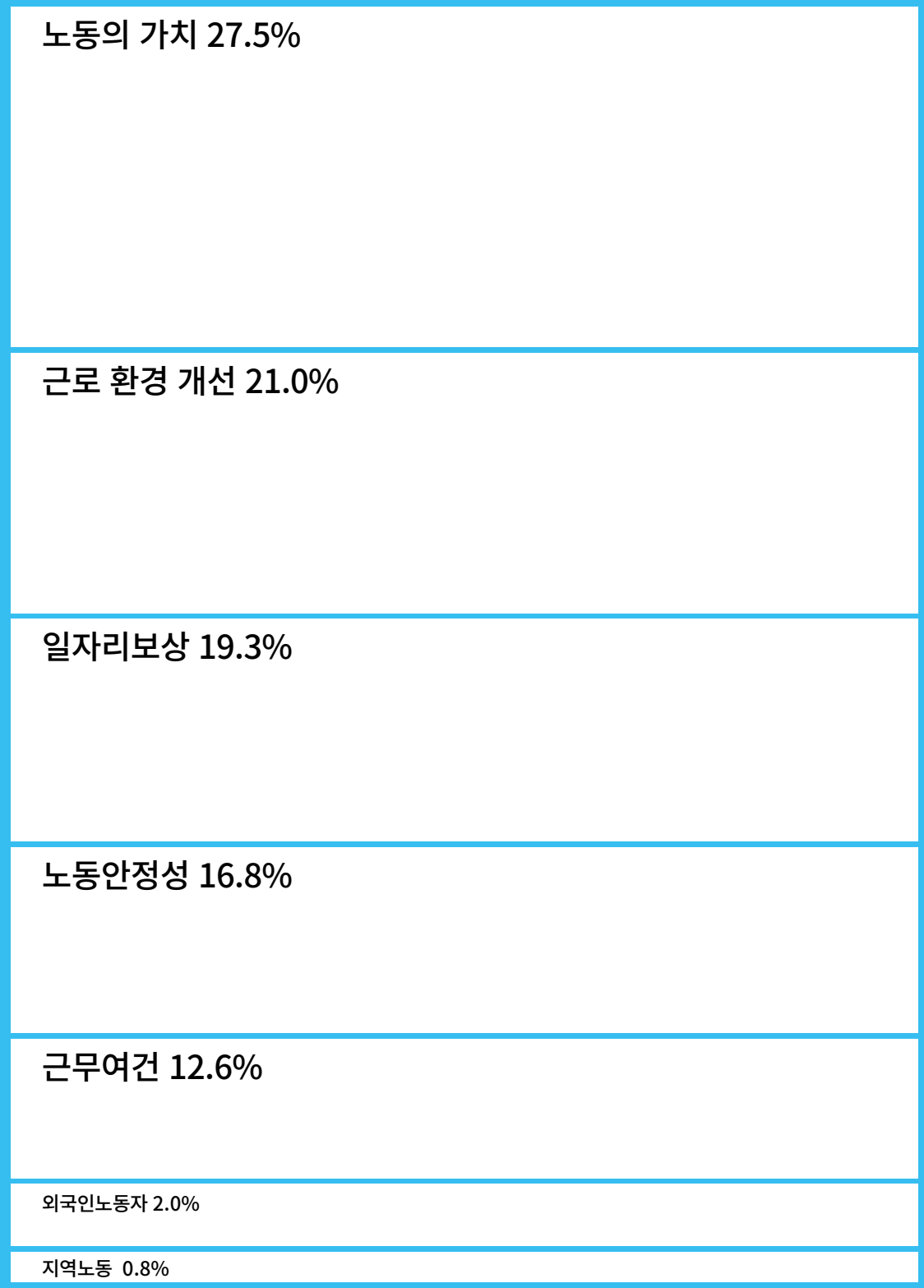
- 왜 한국 건축물 화재 시 유독 가스로 인명 손실이 반복될까요?(김만영)

노동 및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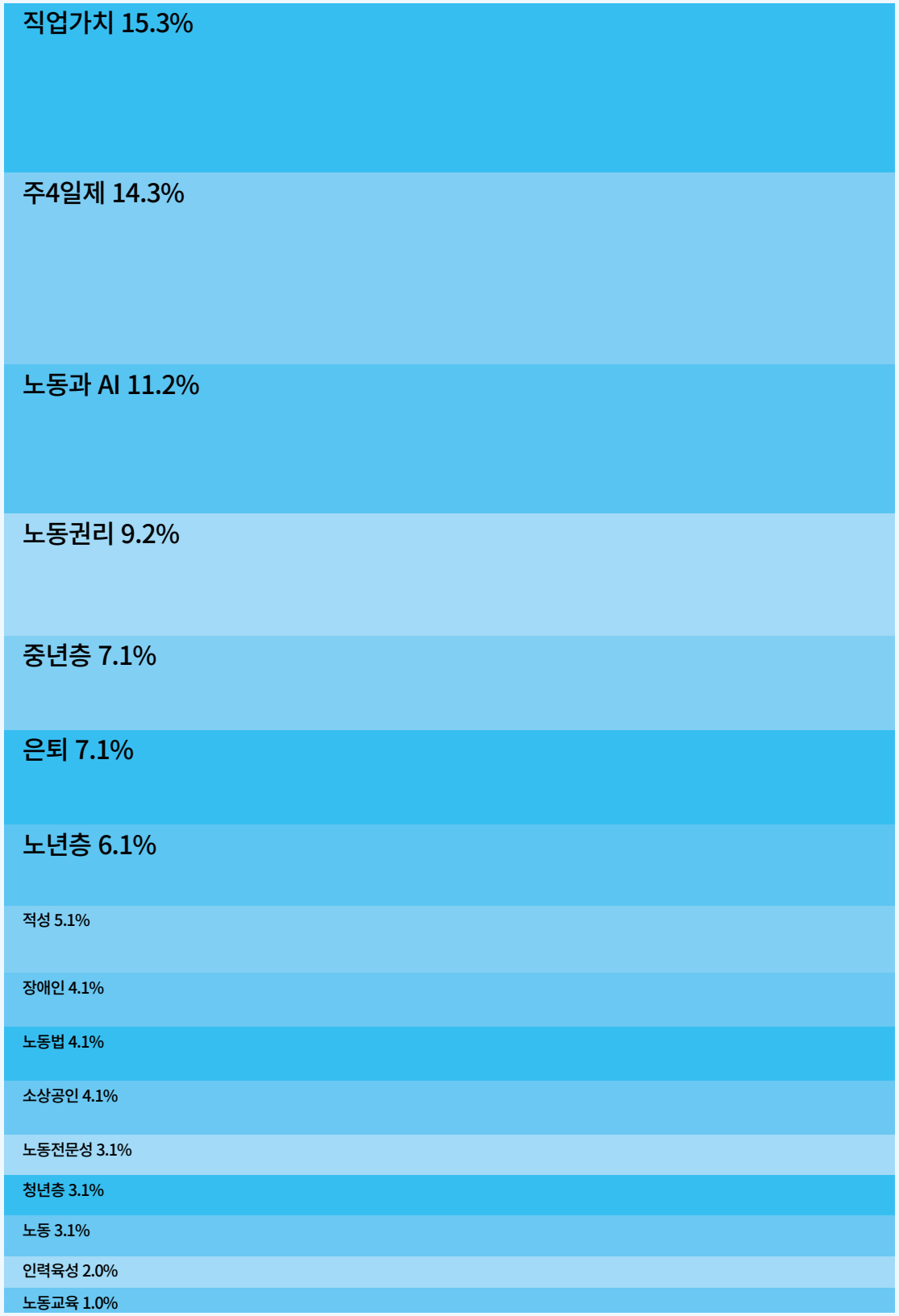
‘노동 및 고용’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노동 환경 개선, 고용 안정, 직업 가치 향상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에서는 직업 간 차별과 보이지 않는 노동의 인정, 사회적 평등을 재정립하려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청소부, 가사노동자, 배달 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평가가 핵심입니다. “청소부와 같은 직업이 의사, 판사처럼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배달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돼야 하지 않을까요?” 주4일제와 노동과 AI에 대한 논의는 더 나은 근로 조건과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노동 시장을 요구하며, 중년층과 노년층의 고용 기회 확대와 경직된 제도의 개선도 강조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공정한 직업 환경, 노동 전문성이 현장 목소리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노동법은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소상공인과 청년층은 불공정한 경제 구조에 대한 회의와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 교육 필요성도 강조됩니다. 근로 환경 개선 항목은 근로시간 단축, 유연한 노동시간 제도,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과중한 업무와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5인 미만 사업장 차별도 지적됩니다. 생산성과 임금 관련 질문은 노동생산성 향상과 부당한 임금 대우를 다룹니다. 육체노동과 육아휴직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요구와 배달노동자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처우 개선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노동 안정성에서는 비정규직과 고용불안 문제를 다루며, 구조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수고용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채용과 구직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공무원 직업 안정성과 노동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논의도 포함됩니다. 직업 선택에 있어 개인의 잠재력과 적성을 고려할 방법도 제시됩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선, 일용직 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불법체류자 문제도 제기됩니다. 지역 노동 항목에서는 서울 집중 문제와 지역 일자리 부족 해결책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들은 근로자 권리 보장과 공정한 노동 환경,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국가적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노동 및 고용 질문 빈도 비율



노동의 가치 빈도 질문 비율

노동의 가치

'노동의 가치'에 관한 시민들의 질문은 직업의 평등과 인간다운 노동의 조건, 기술 변화 속에서 노동의 의미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직업 가치에선 청소노동, 가사노동 등 보이지 않는 노동의 사회적 인정과 직업 간 차별 해소 요구가 등장하고, 주4일제에선 장시간 노동 현실을 벗어나 삶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바람이 드러납니다. 노동과 AI에선 기술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 인간의 존엄, 소득, 국가 내 역할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중년층, 은퇴, 노년층에선 생계와 도전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며, 정년제와 연금 수령 시기 같은 제도의 경직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결국 이 질문들은 인간다운 노동, 자율과 보장, 의미와 존엄이 조화되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업가치

- 아들을 셋 키우고 살림과 집 앞 눈 치우기도 하는데 왜 소득이 없나요? (배춘환)
- 청소부와 같은 직업이 의사, 판사 변호사처럼 인정 받을수는 없는걸까요? (이시현)
- 우리는 왜 노동을 부끄러워하고 폄하할까요? (정세나)

주4일제

- 우리는 언제쯤 주4일제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이주형)
- 왜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일까요? (jheartu7036)

노동과 AI

- AI 시대에 많은 직업이 사라진다면, 종사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김완기)
- 인공지능으로 생긴 노동의 잉여 시간을 인간이 향유 하는 것은 정당한가? (남재하)

노동권리

- 대기업 근로자와 소기업 근로자의 인권은 왜 다르게 적용되는가? (김성구)
-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행복한가요?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강화하나요? (김영환)

중년층

-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을까요? (김범석)
- 이제 50세에 들어서는데 뭘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강동현)

은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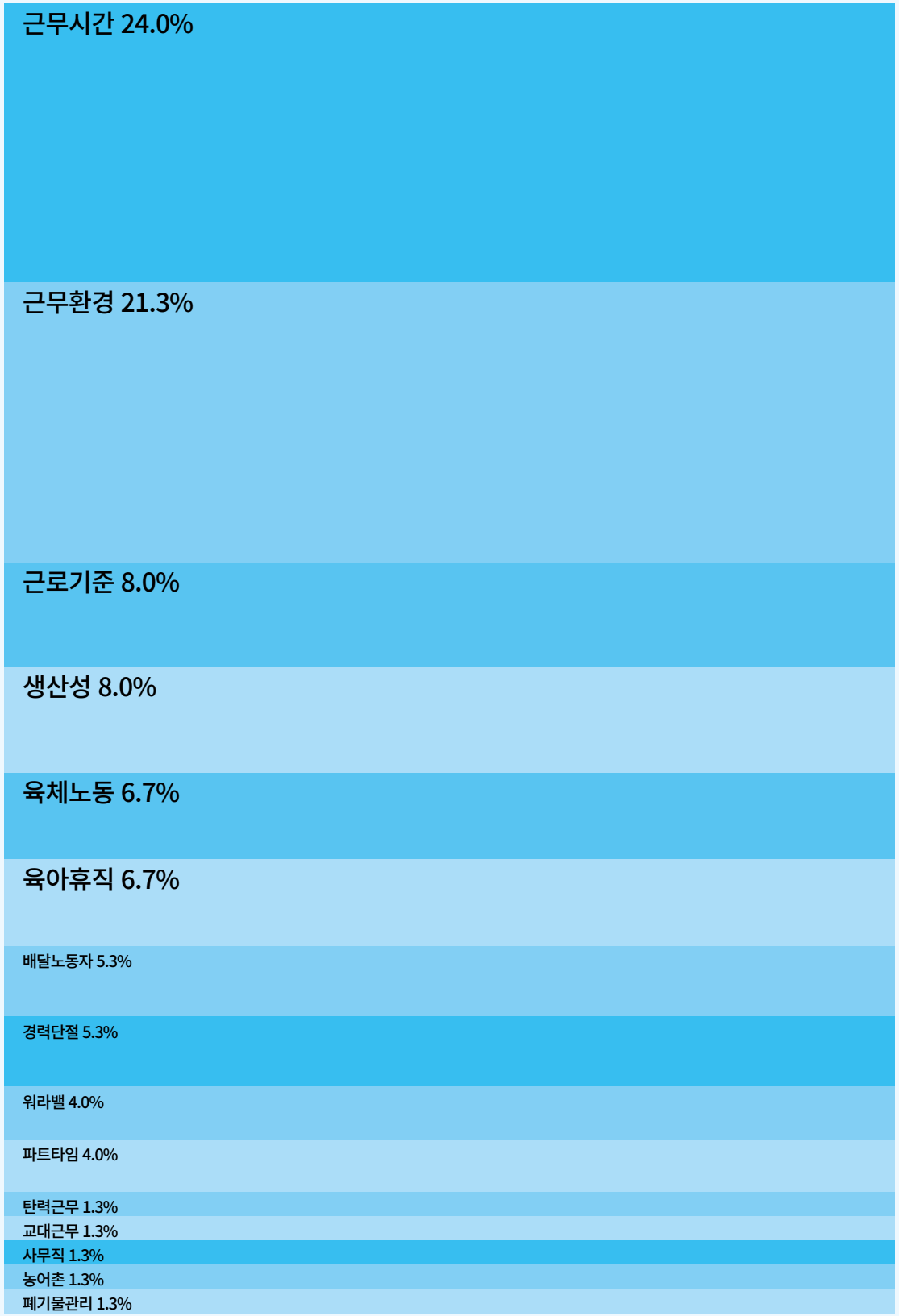
- 나는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조재영)
- 정년 퇴직이 왜 나이를 기준으로 있어야 하지요? (정기독)

노년층

- 노령인구 우선고용에 관한 좋은 정책을 기대합니다. (나승호)
-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너무 늦어요. (김대중)

적성

- 언제쯤 돈을 위해서 일을 하기 보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많아질까요 (김은영)
- 기본소득을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게 일을 찾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오홍영)



근로 환경 개선 질문 빈도 비율

근로 환경 개선

근무시간과 관련해선 일률적인 8시간 체계 대신 직종별 탄력 운영과 노동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근무환경 측면에선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 업무, 반복되는 산업재해,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근로기준에선 연차 기준의 불합리성,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되며,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해고 유연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며, 육체노동자들은 과로, 안전사고, 차별 해소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촉구합니다.

육아휴직은 형식적 확대보다 실질적 접근성과 지속성이 강조되며, 배달노동자에겐 위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생계와 자아실현, 가사노동의 사회적 인정은 성평등 노동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릅니다. 워라밸은 가족과 여가의 균형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근로환경을 단지 '일하는 조건'이 아닌, 삶의 질과 존엄을 결정짓는 사회 인프라로 재정의하며, 노동 존중 사회로의 전환이 지속가능한 국가 운영의 핵심임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 노동 계약의 완전한 패러다임 변화는 불가할까요? 최소 시간을 합의하고 추가 근무를 노동자가 선택하는 방식은 안되나요? (김양현)
- 우리는 왜 아직도 하루 8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나요? (이진우)

근무환경

- 직장에서 동료의 부재가 있을 때 대체인력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남아있는 인원들의 몫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김은영)
-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김화성)

근로기준

- 현재의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은 장기 근속자에게 매우 불합리하다. (이운봉)
-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김승리)

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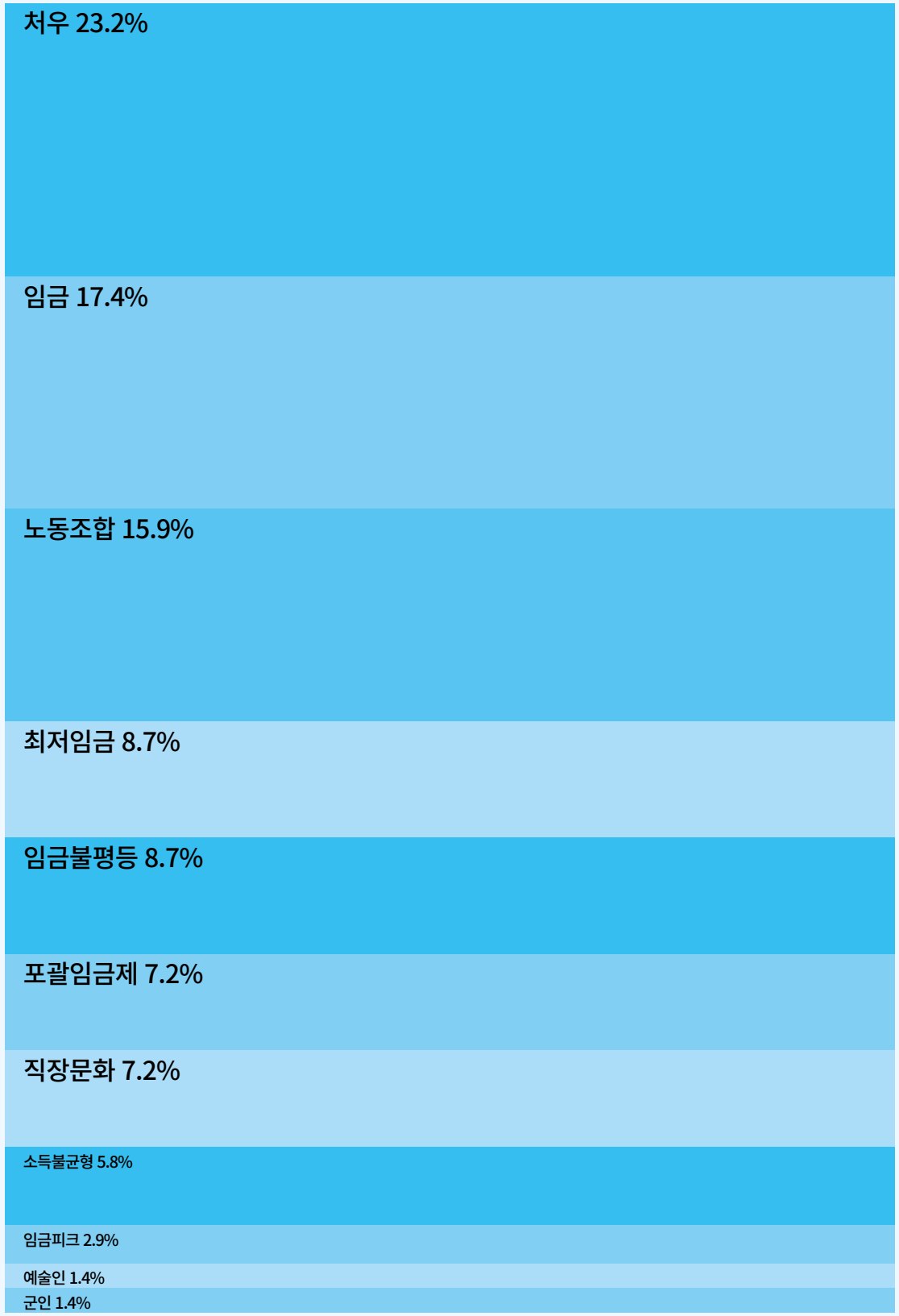
- 한국은 노동생산성 개선에 왜 노력을 하지 않나요? (홍승일)
- 해고가 지금 보다 쉬워지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김장환)

육체노동

- 육체노동자들은 공부 못해서 천대받아도 참아야하는 사회가 당연한가요? (주선영)

육아휴직

- 유급 육아휴직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었으나 부모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희선)
- 출산휴가와 육아 휴가를 좀더 확장했으면 합니다. (남경준)



일자리보상 질문 빈도 비율

일자리보상

'일자리 보상'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단순한 임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구조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배는 더 열정을 쏟고, 땀 흘려 일하지만, 정해진 월급은 항상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당한 일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매번 발생되는 걸까요?"

처우 항목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안전과 복지의 불균형, 정책 결정에서의 당사자 배제 문제 등이 제기되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참여형 결정구조 마련이 요구됩니다. 임금 항목에선 생산직의 임금 정체,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같은 고질적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과 집행력 강화가 강조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질문은 단체협약 무시와 노조 설립의 어려움, 산별노조의 필요성 등,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는것이 왜이렇게 어려울까요?" 최저임금 관련 질문은 최저시급 인상에도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현실, 주휴수당의 제도적 불균형, 제도의 목적성과 수혜 대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선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 고착화 문제와 함께, 실질적 임금 향상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폐지·수정 요구가 나옵니다. 직장문화 항목에서는 공정한 평가와 자유로운 연차 사용 등, 수직적이고 눈치보는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문화적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결국 시민들은 노동의 형태나 직종을 막론하고, 기여와 위험, 노력에 걸맞은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환경을 요구하며, 보상의 구조 자체가 정의롭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처우

- 월급은 항상 같은 부당함이 왜 성실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자주 발생될까요?(변휘원)
-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이들, 과연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 있을까? (박준태)

임금

- 왜 생산직은 시간이 지나도 임금이 작을까요? (최은경)
-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을 왜 막지 못하나요? 의지는 있으신가요? (송희정)

노동조합

- 단체 협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오대환)
-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는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노재이)

최저임금

- 최저시급은 올랐는데 왜 알바비는 확 줄었을까요? (feat.주휴수당) (서주영)

임금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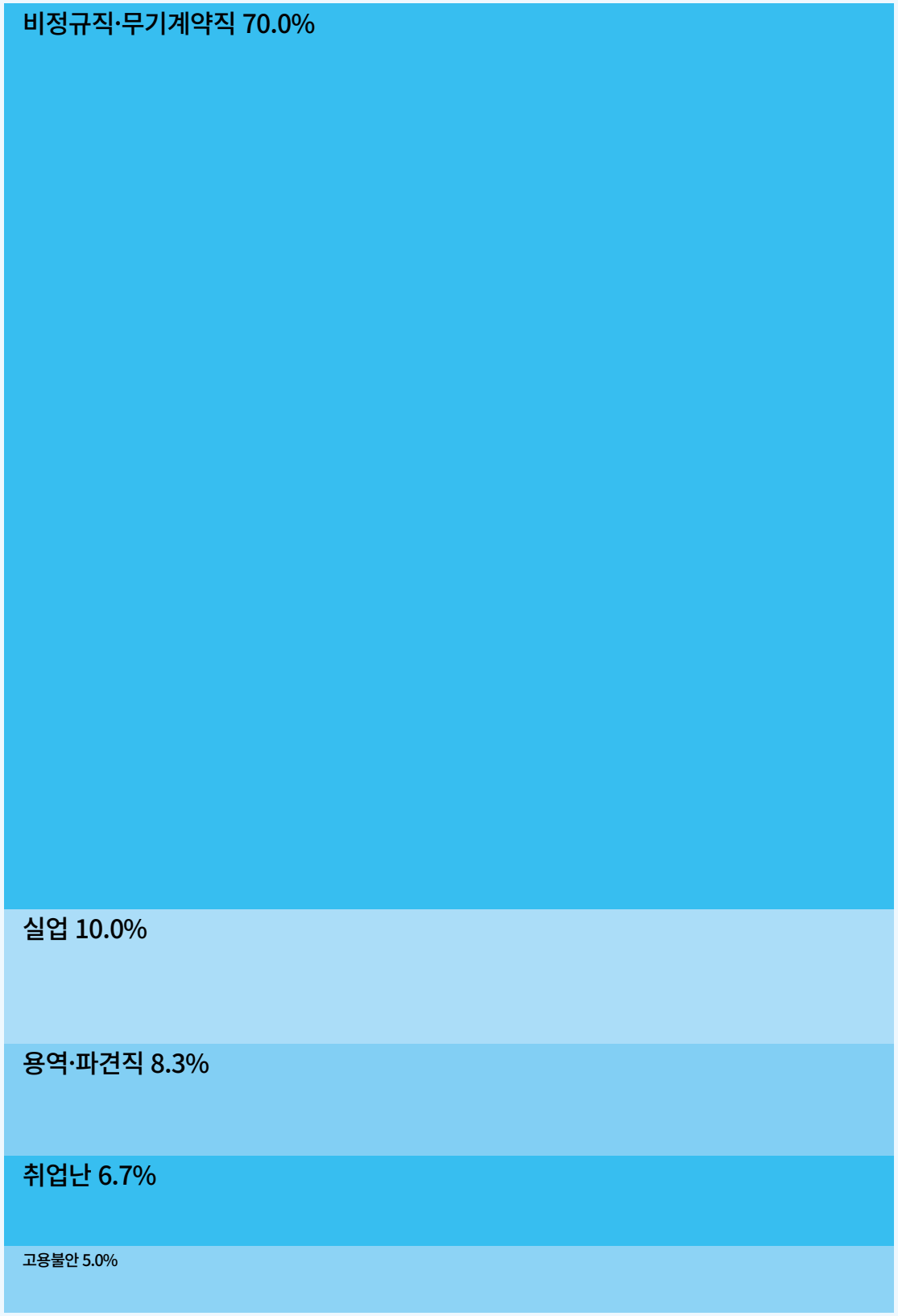
- 왜 한국 여성은 동일 노동에 남성의 70% 월급을 받아야 하나요? (jheartu7036)

포괄임금제

- 포괄임금제를 수정하거나 없애는 것이 최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김도연)

직장문화

- 자신의 역할에 사명감·책임감을 갖고 임하시는 분이 대우 받는 세상, 가능할까요? (권의빈)



노동안정성 질문 빈도 비율

노동안정성

'노동 안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일자리의 단순한 존재를 넘어, 지속 가능한 고용과 공정한 대우,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선 불안정 고용과 차별에 대한 우려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고된 노동을 감당하면서도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현실, 고용 형태 개편과 임금 역전 문제 등이 핵심입니다. "불안정하고 위험한 비정규직이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실업 항목에선 청년실업과 경력단절 등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과 고립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재통합 접근이 요구됩니다. 용역·파견직과 관련해선 외주화의 그림자—과도한 수수료, 책임 회피 구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직접고용 중심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용역 업체 수수료 너무 높지 않나요?" 취업난에 관한 질문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지적하며, 공정 채용과 정책적 안전망 등 구조적 고용 설계를 촉구합니다. 번아웃과 실업이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고용불안 항목은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시대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무리한 창업과 과중한 노동에 내몰리는 현실에서 시민들은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상상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은 고용이 단지 '직장이 있음'으로 끝나지 않고, 존엄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

- 왜 거미줄처럼 비정규직을 이대로 방치하는가? (남현철)
- 비정규직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이명대)
- '2년 계약직'고용형태가 우리 조직과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김은경)
- 상식적으로 안정적인 정규직 보다 불안정적이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최소한 임금은 더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오슬기)

실업

- 경력단절 가산점을 제안합니다. (한승협)
- 실업자 아들이 집에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애)

용역·파견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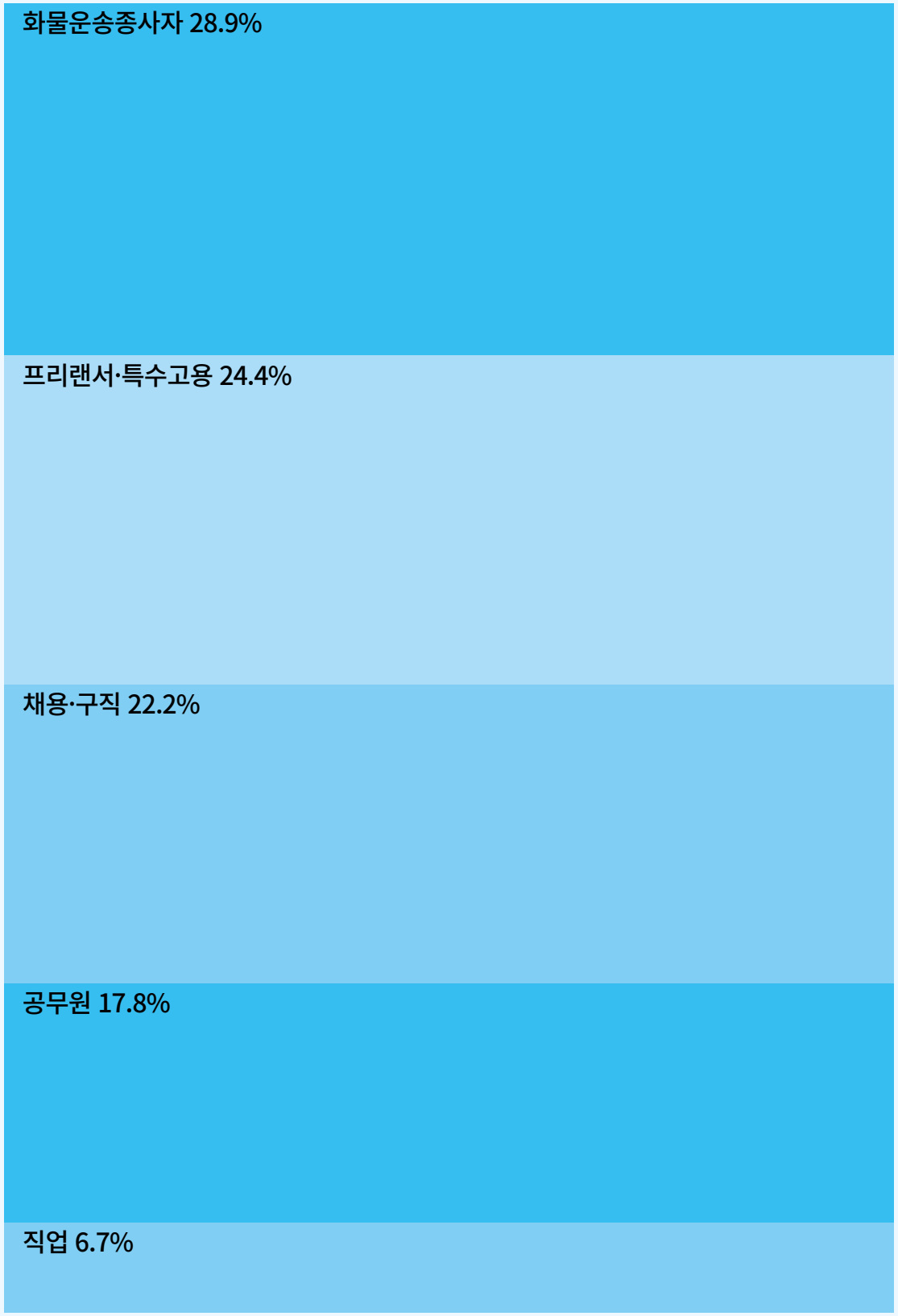
- 용역 파견 일용직 업체의 수수료 너무 높지 않나요? (진창훈)
- IMF 이후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도급사 문제는 언제쯤 없어질까요? (전화영)

취업난

- 직업, 해직에 대해 시민의 사회적 안정망이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정부의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곽준규)
- 많은 사람들이 취업난에 시달리는데, 정작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업무에 번아웃이 옵니다. 왜 기업은 여러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분배하지 않나요? (이은주)

고용불안

- 언제까지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할까요? (안지호)
- 왜 우리는 끝없는 생계 부담과 미래 불안을 안고, 무리한 창업과 과중한 노동에 내몰리는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김강완)



근무여건 질문 빈도 비율

근무여건

근무여건'에 관한 시민들의 질문은 단순한 노동 환경 개선을 넘어, 노동의 공정성, 선택권, 안전, 그리고 자기실현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화물운송종사자 항목에서는 과로, 저임금, 안전 부재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주 6~7일 근무가 당연시되는 관행을 넘어선 운임 현실화와 법적 제도 정비 요구가 강하게 제기됩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에 대한 질문에서는 4대 보험 미적용, 법적 지위의 모호성, 안전망 부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함께, 일한 만큼의 권리 보장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업자일까요 노동자일까요?” 채용 및 구직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채용의 공정성이 핵심 이슈입니다. 학벌, 나이, 성별, 성장과정 등 비본질적 요소들이 평가 기준이 되는 현실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지며, 열린 경쟁, 능력 중심 평가, 편견 없는 채용 시스템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공무원 항목에서는 직업의 안정성과 동시에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제기됩니다. '평생직장'이라는 신화 속에서 공무원 역시 노동자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그에 맞는 노동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선택에 대한 질문은 개인의 잠재력과 적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닌, 의미 있는 일과 자기실현의 기회를 찾고자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진로 설계 시스템의 정비를 요구합니다.

요컨대, 이 질문들은 근무 여건을 물리적 환경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개인의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구조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합적 성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

- 화물노동자의 삶을 위한 운송 요금현실화 방안은? (신준호)
- 택배 노동자 [배송노동, 상하차 노동] 는 언제까지 열악해야 하는가? (홍승욱)
- 화물노동자는 주7일 혹은 주6일 근무가 당연한가요? (차성훈)

프리랜서/특수고용

- 각종 프리랜서의 안전은 언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임휘진)
-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업자일까요 노동자일까요? (호야수수)
- 프리랜서직은 왜 4대 보험이 안되나요? (홍유진)

채용/구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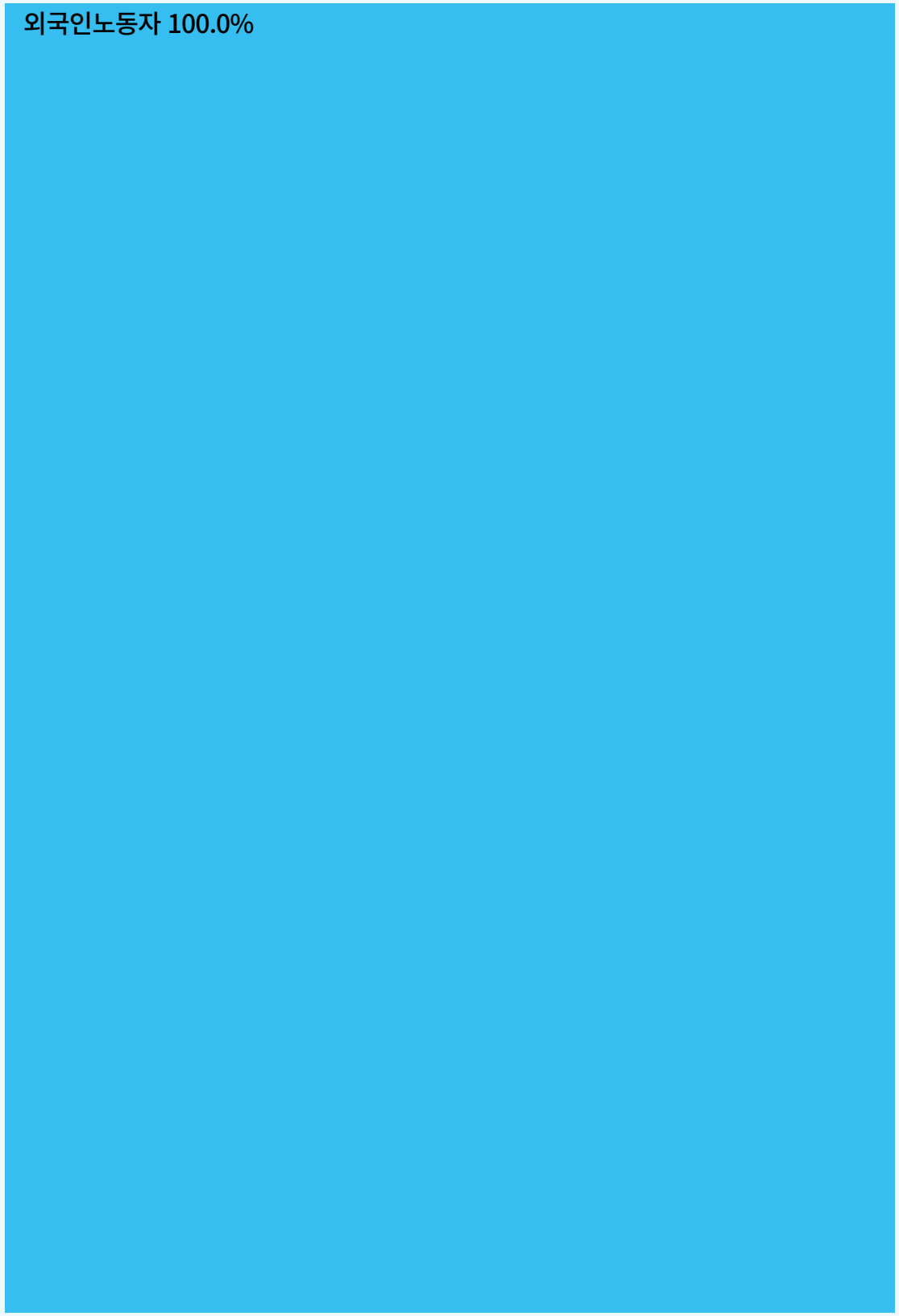
- 왜 대한민국은 국가 및 민간을 포함한 모든 채용시험을 학벌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공개경쟁채용을 못하는 건가요? (김영호)
- 이력서 작성 시 나이 표기란이 왜 있어야 하나요? (홍희경)
- 자기소개서에 도대체 성장과정은 왜 물어보는 걸까요? (이충효)

공무원

- 공무원은 평생직장? (김세진)
- 공무원은 왜 노동자가 아닌가? (박준태)

직업

- 직업에 대해, 우리는 나의 잠재력을 잘 알고 자신과 잘 맞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권민정)



외국인노동자 질문 빈도 비율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시민들의 질문은 외국인 노동을 둘러싼 이중적 시선과 제도적 딜레마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시대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특히 농·축·식품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편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체류자들이 일용직 시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제도적 방치와 관리 미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결국 이 질문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제도적 관리 사이의 균형 그리고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노동·이민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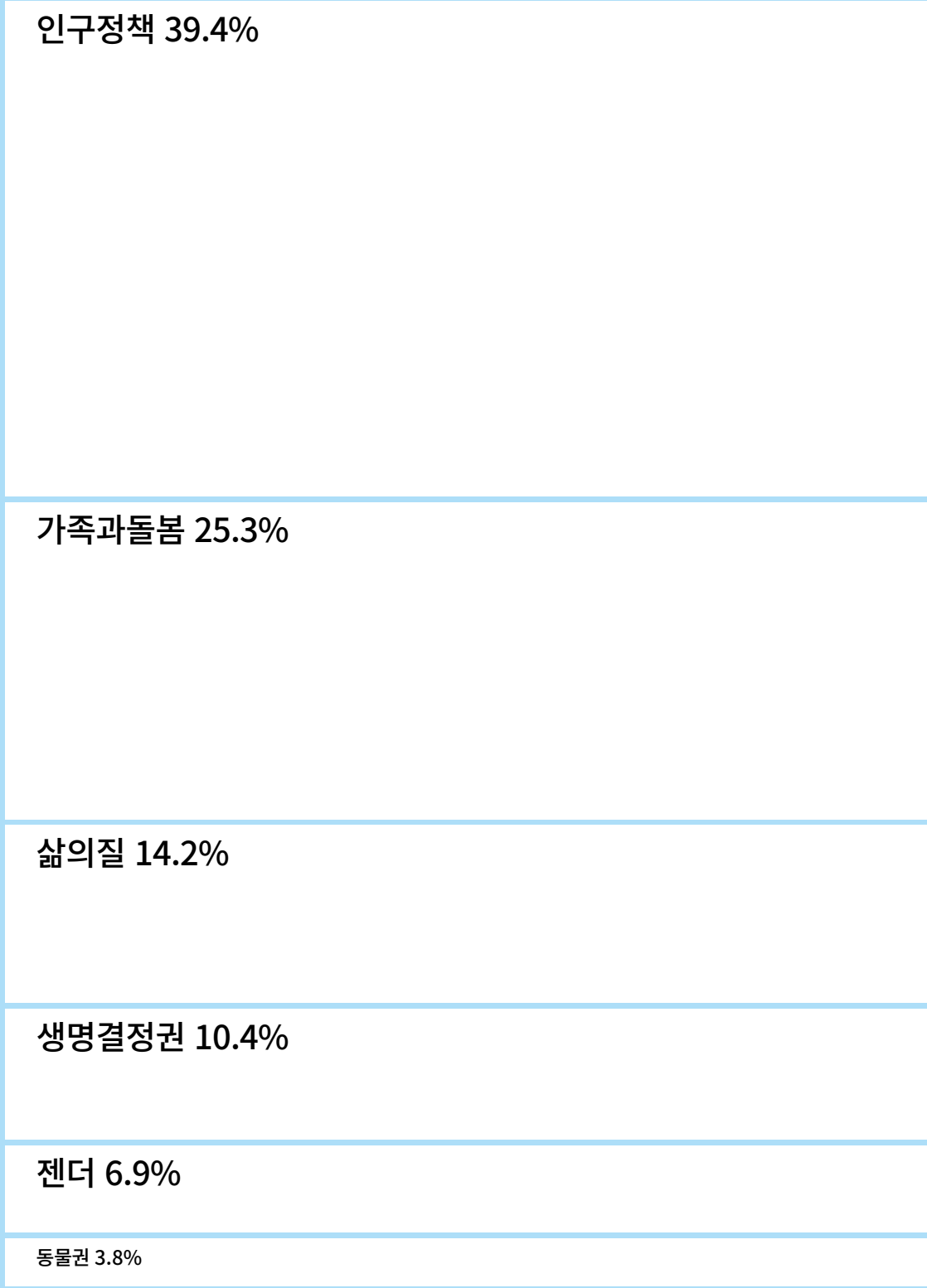
-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특히 일의 강도가 힘든 먹거리 분야에 도움이 되어주고 계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변할 수 없는걸까요? (배우정)
- 왜 불법체류자의 대한민국 일용직 시장의 악영향을 방치하고 있나요? (김영호)
- 인구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개방은 어느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나? (송세현)
- 외국인 노동자 대신 무국적 고려인에게 일자리를 주는게 어떨까요? (문정)

가족과 라이프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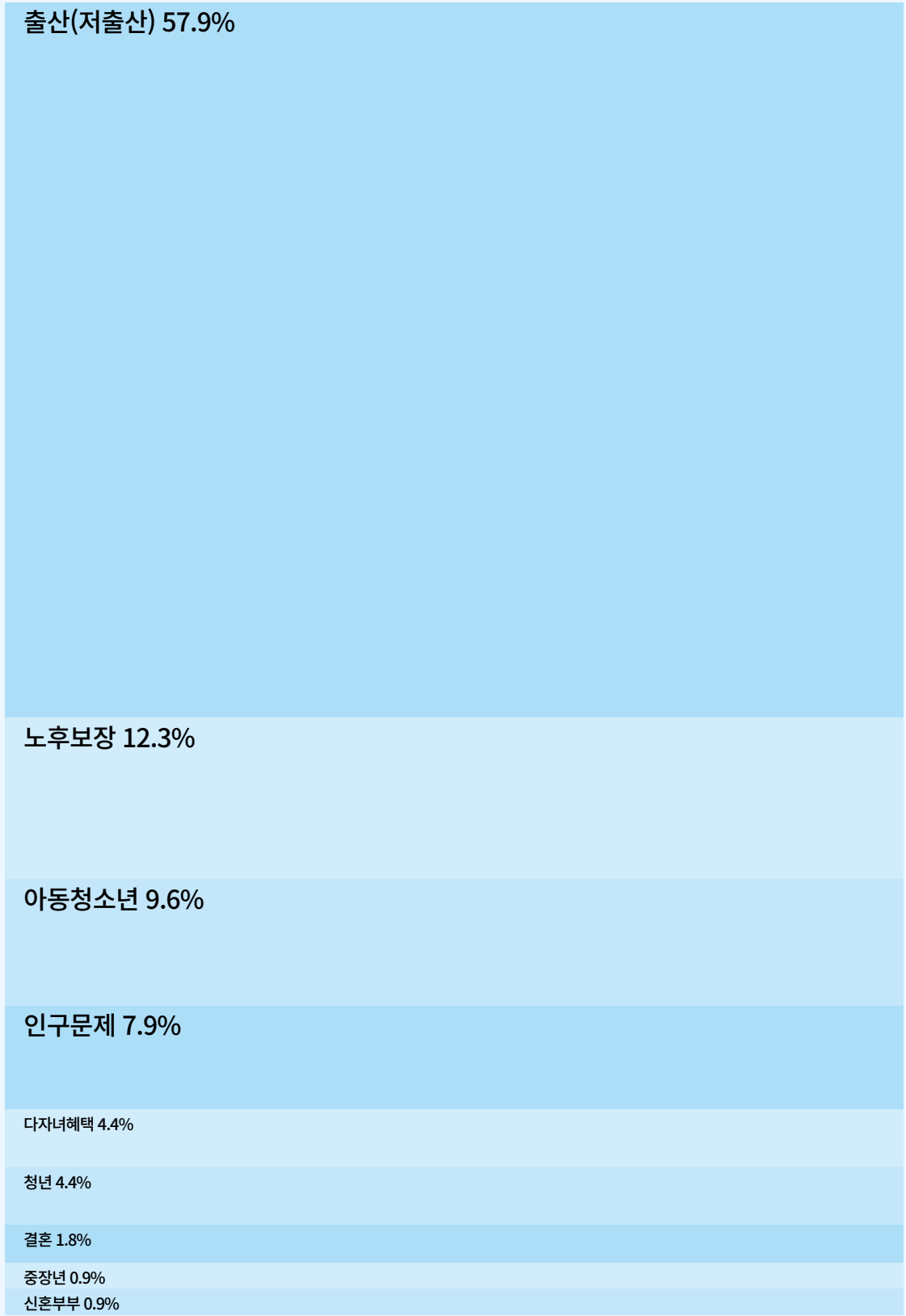
‘가족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나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 전반의 삶의 질과 존엄,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구조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 항목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넘어서 출산·육아·노후·주거·관계 등 생애 전체를 아우르는 실질적 돌봄과 지원 체계를 요구하며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포괄적 인프라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저출산 시대... 자녀출산을 장려하면서 왜 육아는 부모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가? 부모들이 일하는 동안 나라에서 데이케어 할 수는 없는가?” 결혼, 비혼, 청년 독립, 가족 다양성과 같은 질문들은 전통적 가족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 구성 형태를 수용하고 보장하는 제도의 유연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신혼부부·중장년·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실질적 정책 개선이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직 혈연 관계만이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마땅한가?” 삶의 질 관련 질문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불공정한 구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본생활보장·정서적 안정·자아실현이 가능한 사회를 향한 갈망이 드러납니다. 생명결정권 항목에서는 존엄한 죽음의 권리, 연명의료 중단의 자유, 획일적인 장례문화에 대한 개선 요구 등 죽음을 포함한 삶의 마지막까지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전환이 요청됩니다. 젠더 항목에서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성소수자 인권, 다문화 가족의 언어와 생활권 문제, 종교와 차별금지법 사이의 긴장 등 한국 사회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화적 불평등의 현실이 드러나며 이를 넘어서기 위한 법·제도·문화적 기반 마련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권 항목에서는 동물을 생명권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며 동물학대·유기·보호소 정책 개선, 반려동물 건강보험 등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은 ‘가족’과 ‘삶’을 둘러싼 제도와 인식이 근본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집단적 요청이며 물리적 복지와 정서적 존중, 제도적 유연성과 문화적 수용성까지 모두 아우르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가족과 라이프스타일 질문 빈도 비율



인구정책 질문 빈도 비율

인구정책

'인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구조의 위기를 단순히 출산 장려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출산·저출산 항목에서는 국가의 소멸을 우려하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정책 개입, 예컨대 국가 차원의 데이케어 확대, 출산 연계 기본소득, 이민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에게 모든 육아 부담을 전가하는 현 시스템에 대한 피로감과 분노도 함께 표출됩니다. 노후 보장 항목에서는 현재의 삶조차 버거운 상황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불안감이 드러나며, 중장년·고령층을 위한 생계 대책과 세대 갈등 없는 지속 가능한 노후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아동·청소년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과 정서적 안정, 우정, 삶의 가치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현실을 비판하며, 경쟁 중심 교육 시스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질문들은 '출산율'이라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돌봄·교육·노후·주거·관계의 질을 모두 포함하는 인구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인구 문제를 단절된 세대별 대책이 아니라 전 생애 관점의 연결된 삶의 구조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출산(저출산)

- 국가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출생률을 위해 정부가 간접이 아닌 직접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출생률을 높일수 있는 방법은? (이요한)
- 저출산 시대... 자녀출산을 장려하면서 왜 육아는 부모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가? 부모들이 일하는 동안 나라에서 데이케어 할 수는 없는가? (양종석)
- 어렵지만 사회적 합의로 우리나라 500대 또는 1000대 기업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외주 없이 본사 직영은 불가능 할까요. (김연수)
- 어쩌다가 부자 젊은이나 가난한 젊은이들이 거의 다 애 낳는 것을 무서워하는 저 출산의 나라 한국이 되었나요? (박상덕)

노후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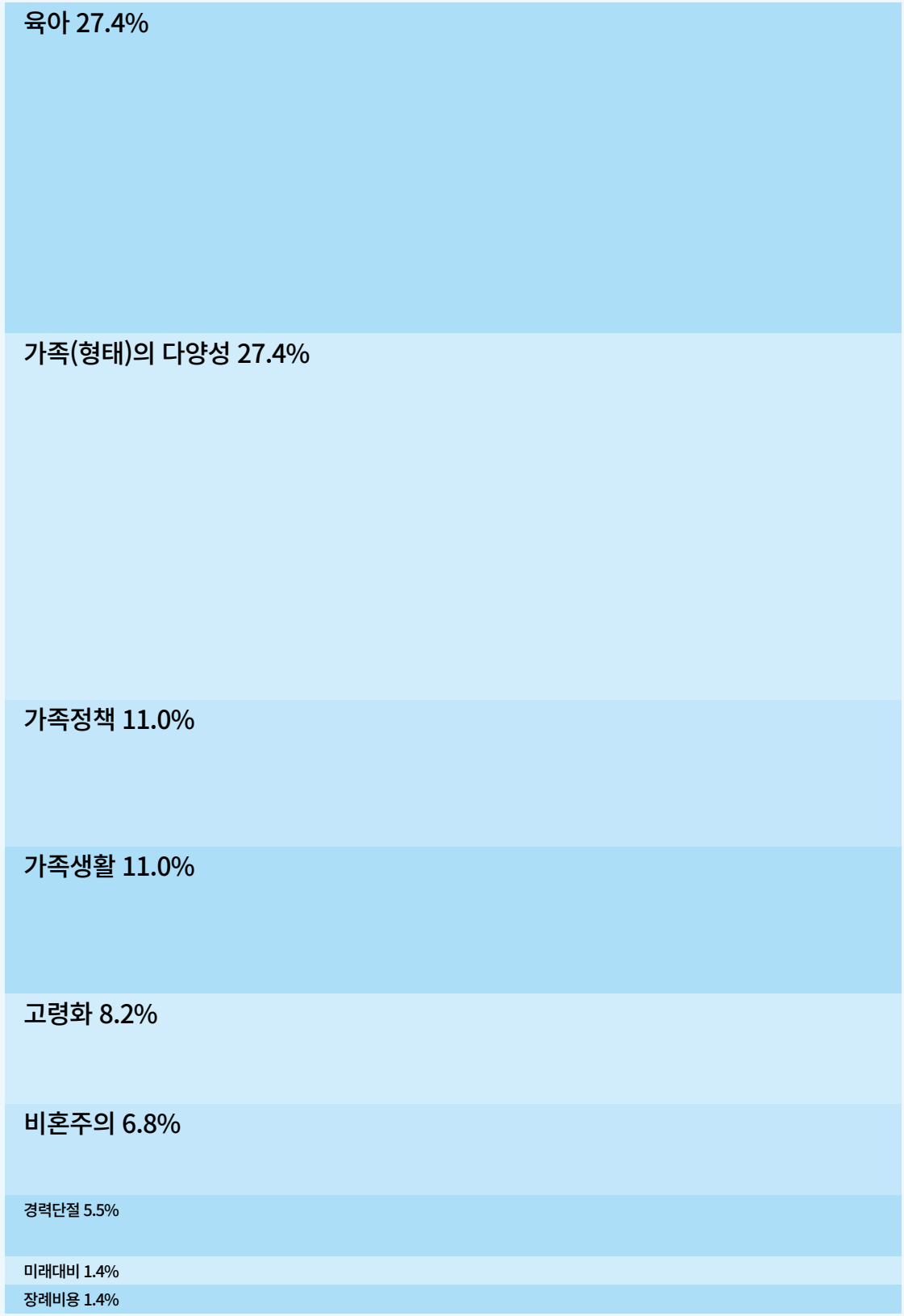
- 몇살까지 일해야 걱정안하고 노후를 살까요? (김관용)
- 어떻게 노후생활을 젊은 세대와 갈등 없이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김미혜)
- 정년퇴직 후에 어떻게 생업을 이어가야 하나요? (황춘식)
- 대부분의 40대는 왜 가난한가요? (장성복)
- 현재를 사는 것도 버거운데 노후에 대한 걱정이 왜 이렇게 큰 걸까요? (김다연)

아동 청소년

-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삶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것에서 벗어날까요? (조선이)
- 다양한 어려움과 혼자라 생각하는 10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황소연)
- 아이들이 우정을 쌓아갈 수 있도록 바꿀 것과 지켜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 (김지수)

인구 문제

- 저출산 인구감소만 걱정? "이미 있는" 인구는 왜 소홀히 할까요? (손신영)
- 인구감소대책의 시작과 끝은 주택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황배)
-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정말 풀 수 없는 문제인가? (송세근)



가족과 돌봄 질문 빈도 비율

가족과 돌봄

‘가족 돌봄’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한 시민들의 질문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가족의 의미와 돌봄의 책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국가와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야하나요?” 육아에 관한 질문들은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과도한 비용과 제도적 불합리함, 특히 아버지의 육아휴직 현실과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에 대한 구조적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맞벌이인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과연 옳은 걸까요?” 가족(형태)의 다양성 항목에서는 1인가구, 비혼, 동거, 재혼, 다문화 가족 등 기존의 전통적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바깥에 있는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존중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됩니다. 가족정책 관련 질문에서는 결혼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현실과 양육·출산 예산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가족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합니다. 가족생활과 관련한 질문들은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에 가정교육과 어른의 책임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고령화에 관한 질문들은 퇴직 이후 삶의 급격한 침체, 건강 수명의 단축, 노인의 생계 불안 등 고령사회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촉구하며,“정년 퇴직 후의 삶은 왜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이처럼 가족 돌봄과 관련된 질문들은 ‘가족’이 더 이상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연대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변화된 가족 구조에 맞춘 정책과 제도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아

- 왜 이 나라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야하나요? (윤희정)
- 아빠들 육아휴직하기 왜이리 어렵나요? (이세미)
- 맞벌이인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과연 옳은 걸까요? (변지우)

가족(형태)의 다양성

- 1인가구 입니다. 식당에서 혼밥은 눈치를 봐야 하나요? (권세현)
- 오직 혈연 관계만이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마땅한가? (임상현)
- 한부모, 재혼, 다문화, 비혼동거 , 공동체, 동성, 1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존재하며 이들을 위한 여러 복지 서비스 시스템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사원)

가족정책

- 결혼보다 이혼이나 따로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진용호)
- 자녀 양육 및 저출생 관련 예산은 잘 쓰여지고 있는가? (김동곤)

가족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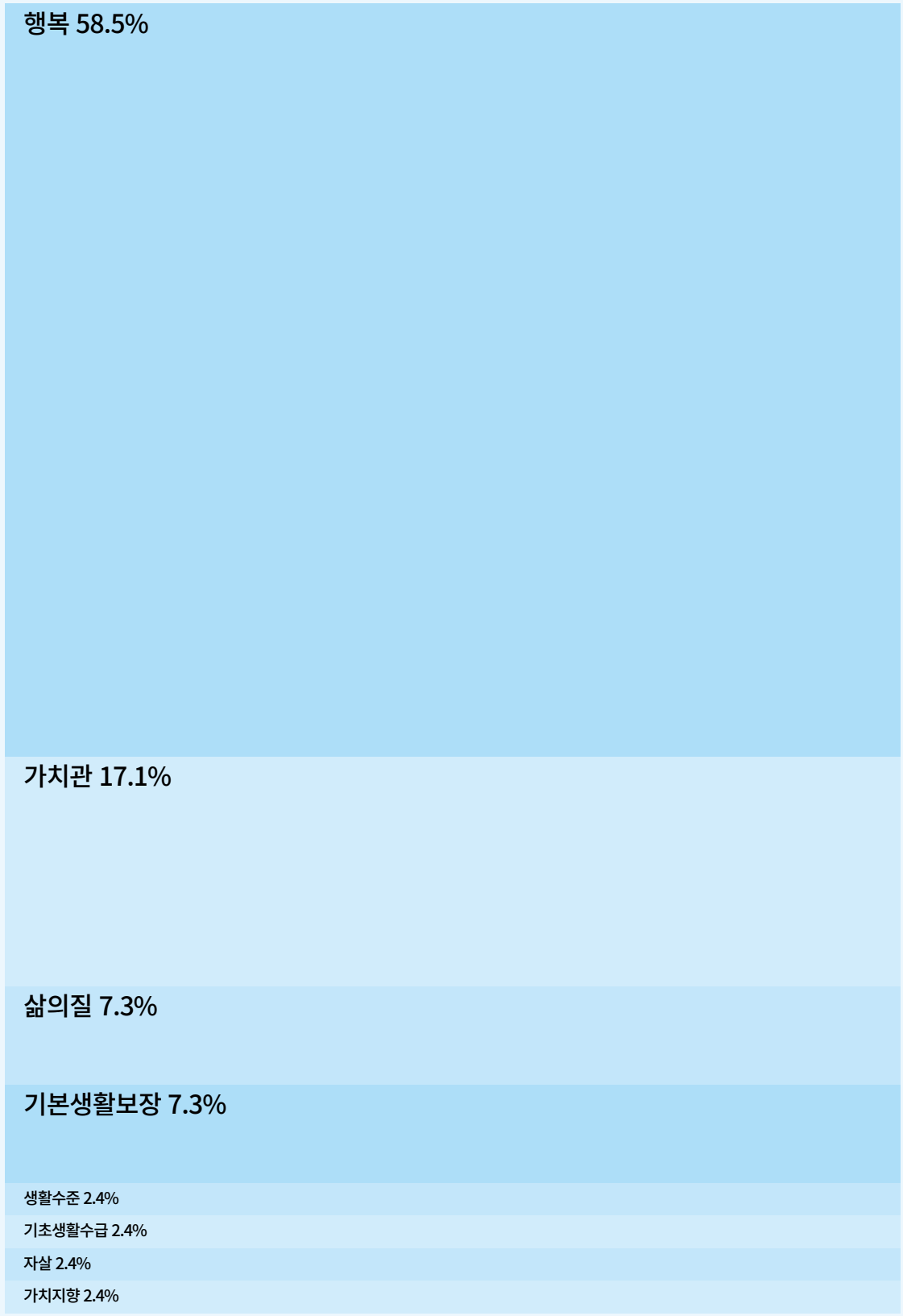
- 사회구성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파탄나지 않게 하려면? (이용수)
- 가정교육의 복원과 어른의 복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건기)

고령화

- 건강수명은 지난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의 삶은 나아질 수 있나요? (오상윤)

비혼주의

- 1인 가구(비혼)에 대한 지원은 있는가? (여경희)



삶의 질 질문 빈도 비율

삶의 질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생계나 물질적 조건을 넘어, 인간다운 삶의 기준과 행복에 대한 집단적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 항목에서는 삶의 방향성과 정의, 기본소득 실험 같은 시도를 통해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바람이 나타납니다. 가치관에 대한 질문들은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함께, 타인의 기준에 맞춘 삶, 직업 중심의 사회 등 우리 사회의 고착하된 삶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과 생활수준 항목에서는 "왜 평범하게 살기 위해 이토록 죽도록 노력해야 하는가"라는 절박한 질문을 통해, 현재의 삶이 구조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드러납니다. 기본생활보장과 기초생활수급 항목에서는 성실히 살아온 이들조차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좌절과 제도 개선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살 항목에서는 극단적 선택이 빈번한 사회 환경의 원인을 묻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적 대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살 수 있는 사회'를 넘어 '살 만한 사회'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시민들은 물리적 보장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이 함께 설계된 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복

- 태어난 김에 사는 세상 우리는 어떤 로드맵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김우진)
- 기본소득을 스스로 만들어보는 실험을 하는건 어떨까요? (유현석)
-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어른들의 답은?(하준서)
- 내가 행복하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정원희)
- 국민이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 (안정희-p3m3p)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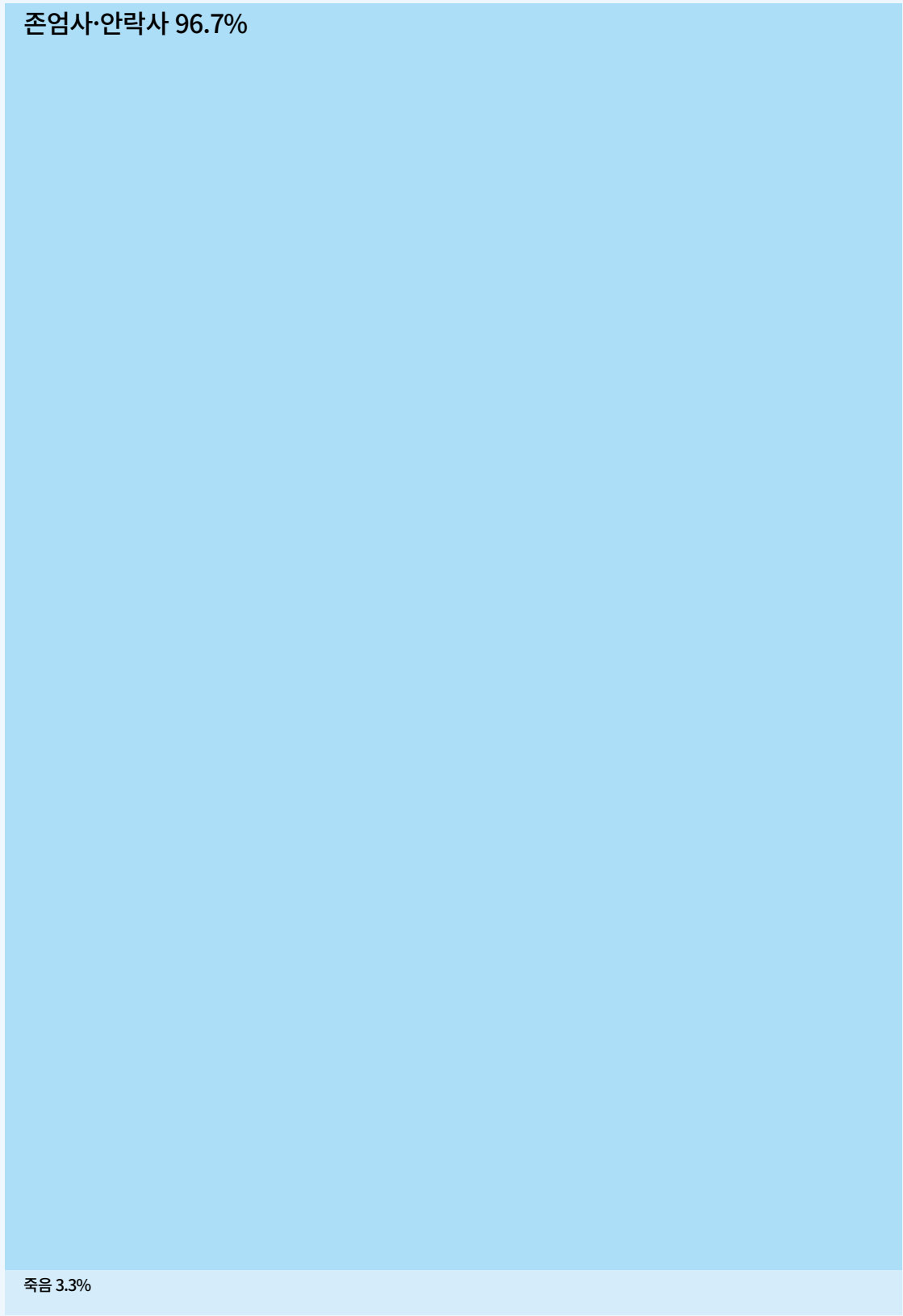
- 인간의 궁극의 목표...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행복을 향한 진지한 고민을 왜 정치권에서는 진지한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요? (최남식)
-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의 잣대를 생각하며 살까요? (김주원)

삶의 질

- 대한민국에서는 왜 죽도록 노력해야 평범하게 살 수 있나요? (조재일)
-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삶의 질이 올라갈수 있는 길이 과연 있는걸까? (장대흥)
-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미영)

기본생활보장

- 평생 성실히 일한 자들의 기본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소희)
-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사람답게 사는 게 보장되는 나라 만들 수 있을까요? (서원호)
- 8가족의 기초 생활 수급자입니다 이대로는 너무나 생활이 어렵습니다 (문철응)



생명 결정권 질문 빈도 비율

생명 결정권

'생명결정권'에 대한 질문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존엄사와 안락사 항목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편안하고 품위 있게 생을 마무리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가정에서의 연명의료 중단, 요양시설의 비인간적 환경에 대한 개선 요청 등은 죽음을 단순한 의료나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연장선에서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권리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가정에서 의료서비스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방법은 없나요?" "요양원은 죽으러 가는 곳이고 실제로 그렇던데 왜 해결이 안될까요?" 또한 죽음 이후를 다루는 납골당 항목에서도 획일화된 장례문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죽음조차 개인의 다양성과 존엄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바람이 드러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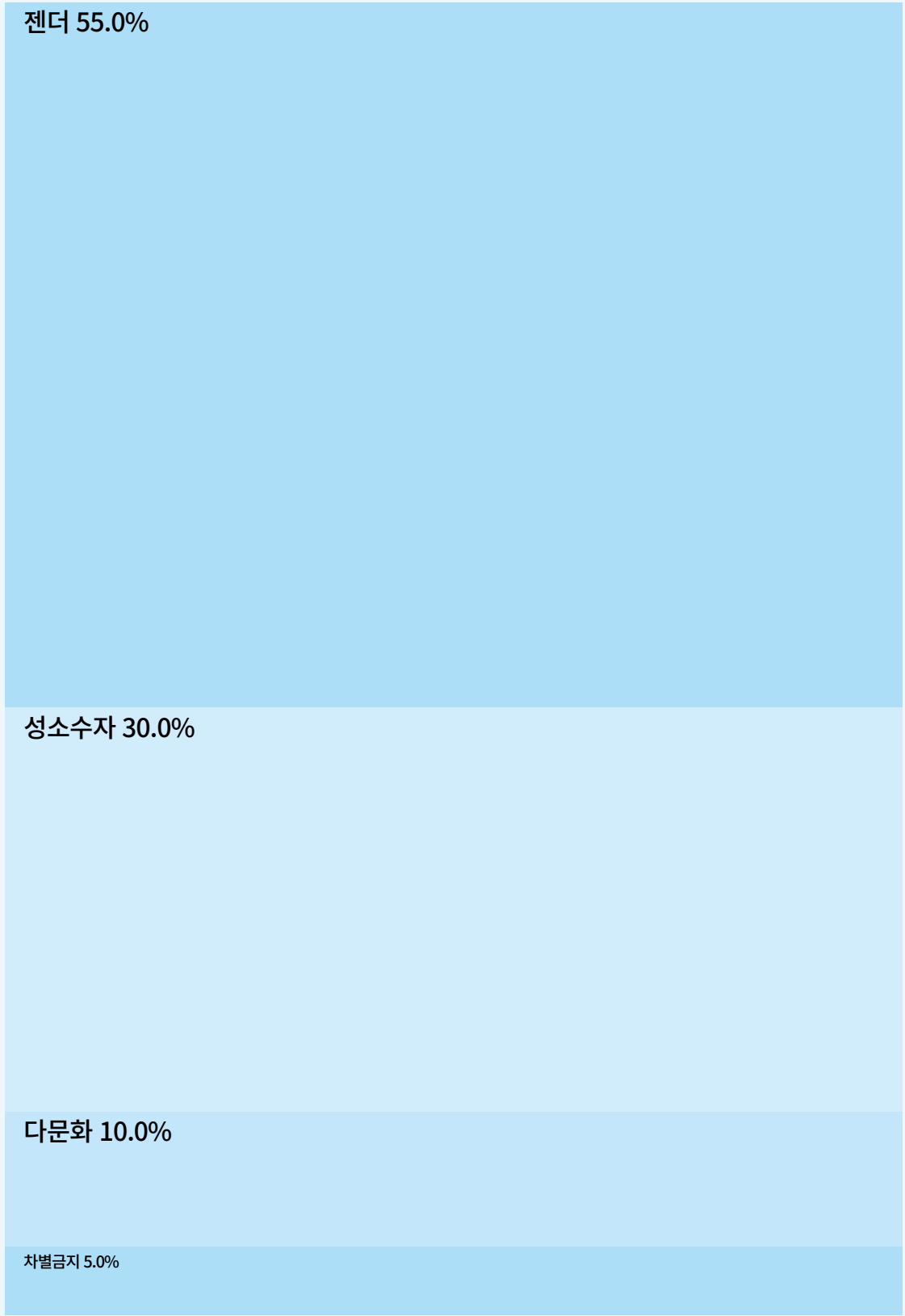
생명과 죽음이 모두 개인의 결정권 안에서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존엄사/안락사

- 태어남은 나의 선택이 아닌데 죽음도 선택할 수 없는건가요? (김종우)
- 가정에서 의료서비스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방법은 없나요? (김도연)
- <인간의 존엄사 안락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료불가한 견딜수없는 통증으로부터 벗어나 죽음을 맞이하게 돕는 것도 생명존중이 아닐까요? (손성문)
- 고령으로 늙고 병들었을 때 편안하고 안락하게 죽을 권리는 왜 없을까요? 요양원은 죽으러 가는 곳이고 실제로 그렇던데 왜 해결이 안될까요? (정소영)
- 고통 없이 죽을 순 없을까? 편안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은 언제 올까? (박주환)
- 웰 다잉 문제를 왜 국가가 유연하게 생각 하지 못할까? (박하영)
- 나는 집에서 죽고 싶어요. (장정희)

죽음

- 우리나라 납골당은 왜 다 천편일률적인걸까요? (김민정)



젠더 질문 빈도 비율

젠더

'젠더'에 관한 시민들의 질문은 성별, 성적 지향, 문화적 다양성에 따른 차별, 그리고 제도의 부재를 넘어 일상 속 불평등을 바로잡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젠더 영역에서는 여성에게만 출산 여부를 묻는 면접 문화처럼 은연중에 작동하는 구조적 차별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성소수자 관련 질문에서는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결혼 합법화 필요성, 차별금지법의 실효성 등에 대한 엇갈린 시선이 공존하면서,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의제임이 드러납니다. 다문화 항목에서는 국제결혼 가정의 언어 장벽 등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제도 보완이 요구되며, 차별금지 항목에서는 종교적 신념과 법 제정 사이의 긴장이 드러납니다.

이 질문들은 성별, 성정체성,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문화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젠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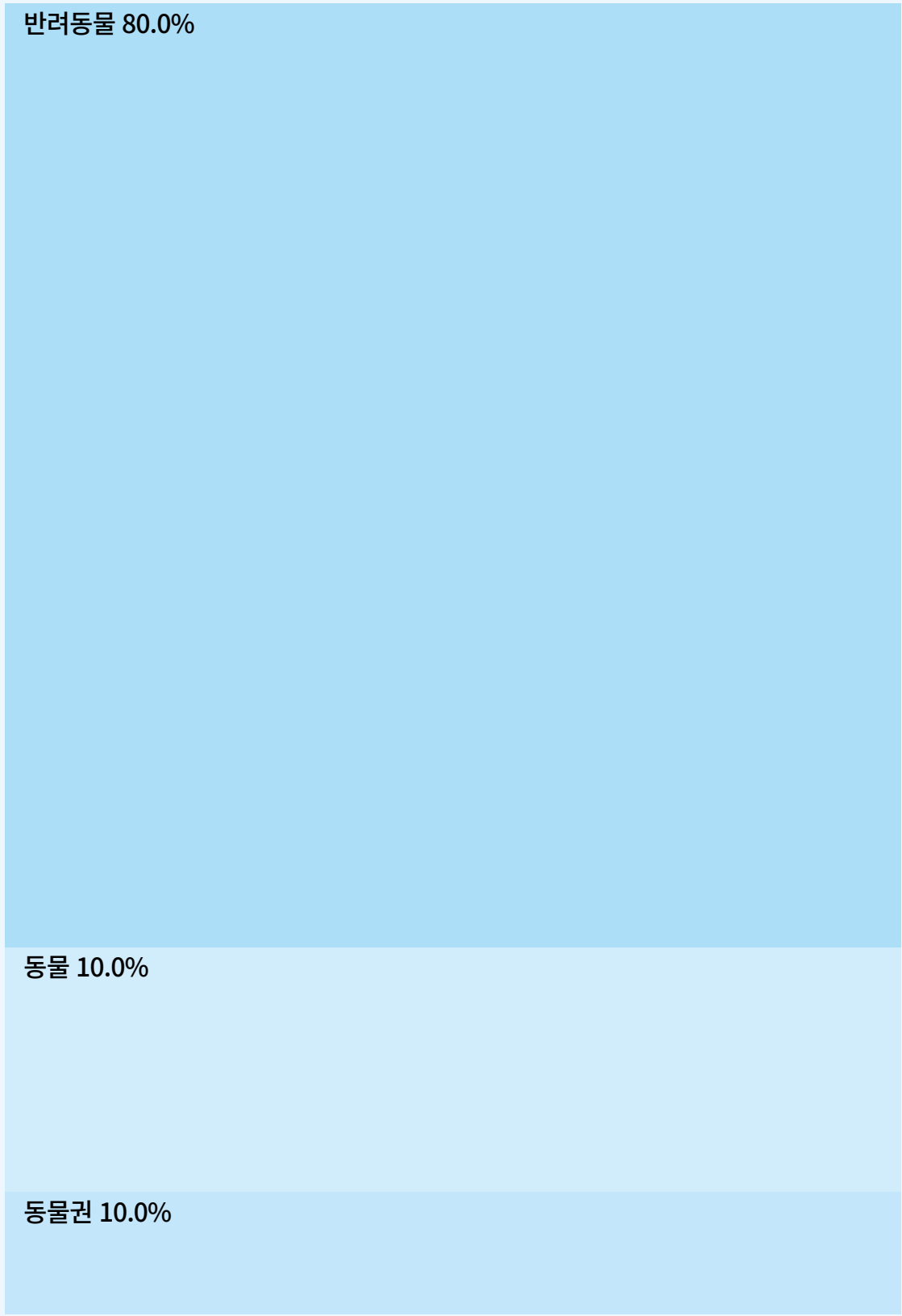
- 면접볼 때 2030 여자들에게 아이 생각은 있냐는 질문 안하면 안 되나요? (김도연)
- 젠더가족부에 대한 편견과 갈등, 이대로 괜찮은가? (서효란)
-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 운동가들이 나아갈 방향은? (지재우)
- 왜 남자 화장실을 여자가 청소하나요? (한진희)
- 젠더를 향한 성차별, 언제쯤 근절될까요? (국윤나)

성소수자

-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를 해결할 수 있을까? (권경훈)
- 차별금지법 대상은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이지, 동성애를 인정은 안 됩니다 (이아영)
- 성소수자 결혼 언제 합법화되나요? (문이현)

다문화

- 국제결혼 8년차로 부부간 언어 소통이 어려운데 관련 법령 등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병국)



동물권 질문 빈도 비율

동물권

'동물권'에 관한 시민들의 질문은 인간 중심 사회에서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함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하게 드러납니다.

반려동물 항목에서는 건강보험 도입과 같은 사회보장 체계 편입 요청부터, 학대·유기·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문제 등 폭넓은 복지 인프라의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동물보호 항목에서는 비효율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보호소 운영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실효성 있는 동물학대 처벌 및 입양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물권 항목에서는 동물 보호 단체의 목소리에 편중된 정책이 다른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며, 균형 잡힌 법·제도의 설계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은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생명권을 가진 존재로 존중하며, 법적·행정적 장치를 통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을 만들 수 없을까요? (강수진)
- 학대, 품종개량, 파양, 유기,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권 문제. 나라에서 동물복지를 위한 근간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지향)
- 반려동물 건강보험제도를 왜 국가에서 만들지 않나요? (김금란)
-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배경환)

동물

- 동물학대법 처벌강화, 죽이는 시보호소가 아닌 살리는 시보호소. 유기견,유기묘 공고기간을 꼭 거쳐야만 입양,임시보호를 할 수 있는 어이없는 법안이 살릴수 있는 아이들까지 죽이고 있는것을 알고는 계시는지요? 보호소법도 들여다 보시고 현실정에 맞는 법안으로 바꿔주실수 없나요? (황지연)

동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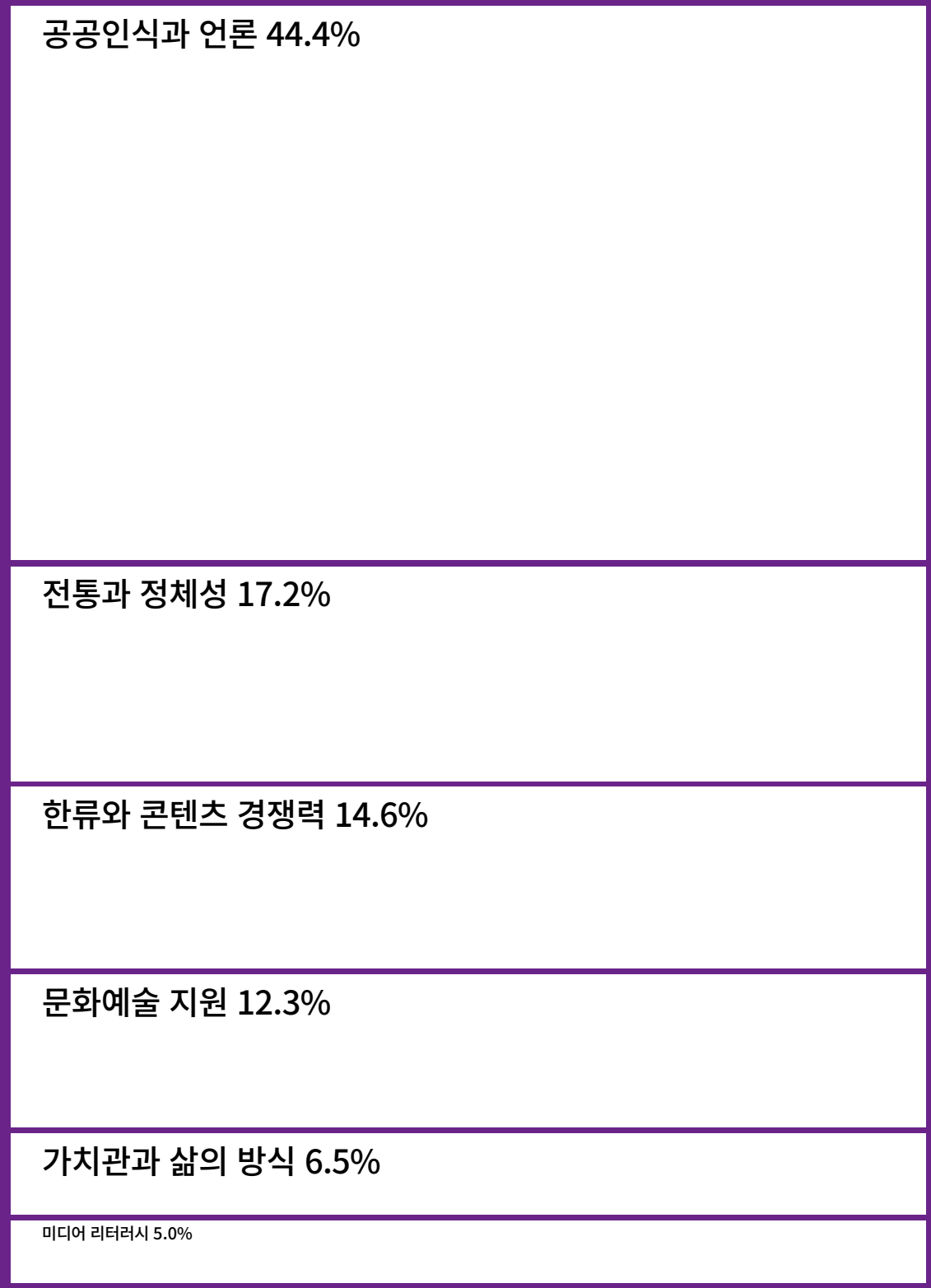
- 동물보호단체의견만 듣고 애견 Breeder들의 권리는 침해돼도 되나요? (오윤경)

문화 및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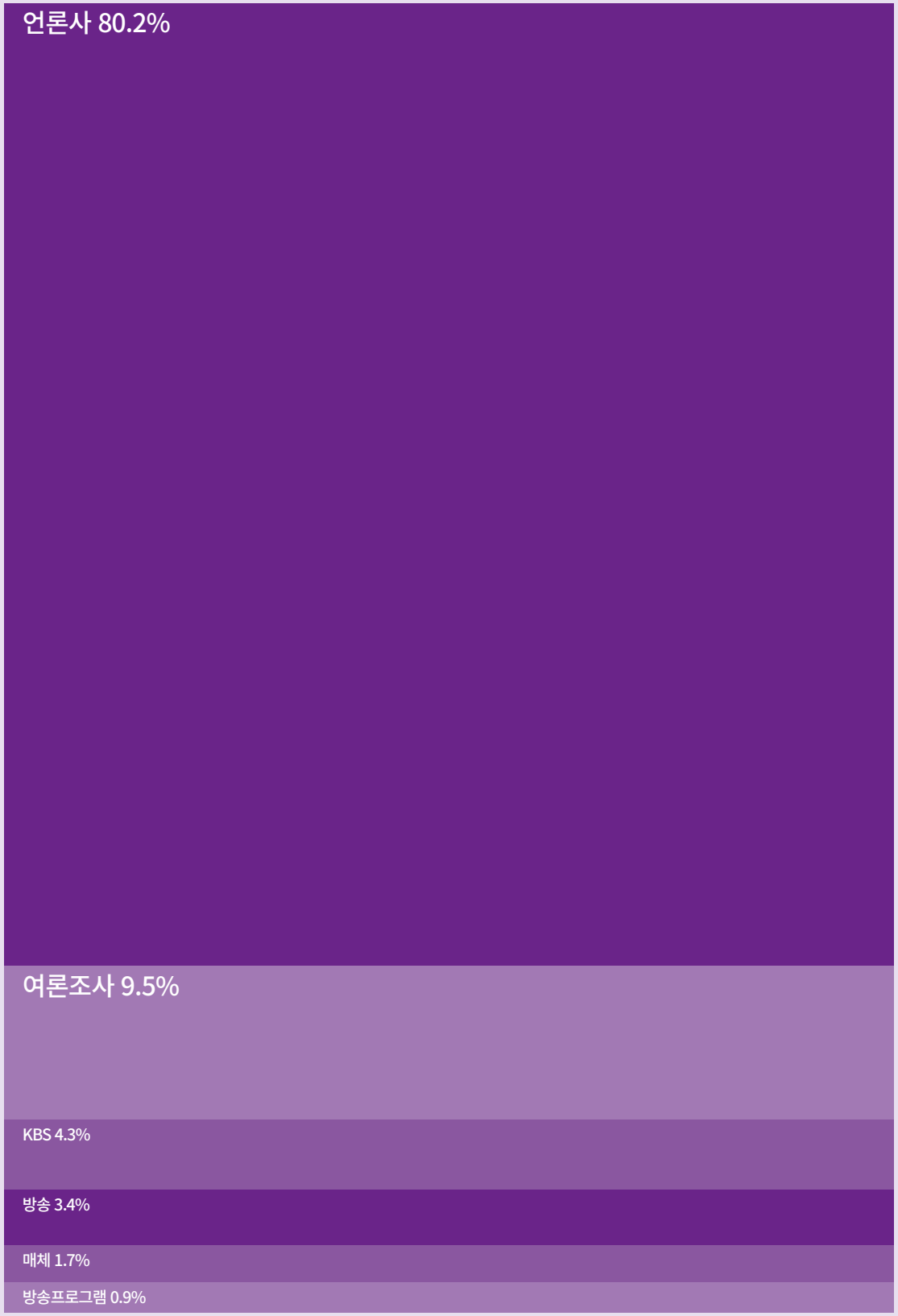
‘문화 및 미디어’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의 문제를 넘어, 정보의 신뢰도, 정체성의 지속, 문화 향유의 형평성, 창작자 처우, 삶의 방식 존중, 표현의 자유 등 민주 사회의 토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총체적 재설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신뢰도 추락에 대한 깊은 실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공정하지 못한 언론을 제어하지 못하나요?”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인 막말, 거짓뉴스와 언론의 확대보도 행태는 언제 고쳐질까요?” 언론과 공공인식 분야에서는 언론의 정치적 편향과 가짜 뉴스 확산, 여론조사의 신뢰 저하, 공영방송의 수신료 논란, 지역 방송 접근성 문제 등이 지적되며, 정보 전달 구조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회복할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전통과 정체성 영역에서는 친일청산, 문화재 보존, 한글 표기 방식, 애국가 논의 등 문화적 주권과 정체성 유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됩니다. 한류와 콘텐츠 경쟁력 분야에서는 K팝, 한식, 스포츠, 게임, 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장 속에서도 산업 내부의 불공정과 불균형, 공정한 접근권, 창작자 생계 등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위 1프로 이외 영화인의 대다수는 소리 없이 죽어갑니다.” 동시에 해외 팬과의 교류 확대, 문화 다양성의 포용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정비 요구도 제기됩니다. 문화예술 지원 영역에서는 창작자 중심의 정책 전환과 함께, 프리랜서 예술인의 사회보장, 청년문화의 자율성 확보, 공공 문화 인프라 확충, 예술의 사회적 효용성 논의, 스포츠와 예술의 공공 접근성 보장 등 포괄적인 문화 생태계 개선 요구가 등장합니다.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는 독서 문화의 위축, 종교 갈등과 사이비 문제, 채식주의자의 권리, 취미에 대한 제도 미비 등 개인의 삶의 방식과 신념이 존중받는 포용적 사회 시스템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에서는 뉴미디어의 확산 속에 표현의 자유와 정보 왜곡 사이의 균형, 공익 제보 보호, 포털 권력 견제, 교육 시스템 내 미디어 이해력 함양, 원전 번역의 부진 등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시민의 비판적 사고력과 지적 접근성 강화를 위한 총체적 미디어 환경 재정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의 명암과 표현의 자유, 뉴미디어 관련으로 법안이나 이런 걸로 제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화 및 미디어’에 관한 시민의 질문들은 사회 전체의 질적 성숙과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전환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콘텐츠 생산·소비를 넘어 공동체의 가치, 삶의 다양성, 공공의 신뢰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미디어 질문 빈도 비율



공공인식과 언론 질문 빈도 비율

공공인식과 언론

'공공인식과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언론과 미디어가 오히려 신뢰를 해치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편향성, 무책임한 보도, 가짜 뉴스의 확산, 언론 개혁의 지연에 집중되며,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왜곡된 조사 결과의 유통과 확산을 우려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됩니다. "왜 왜곡된 여론조사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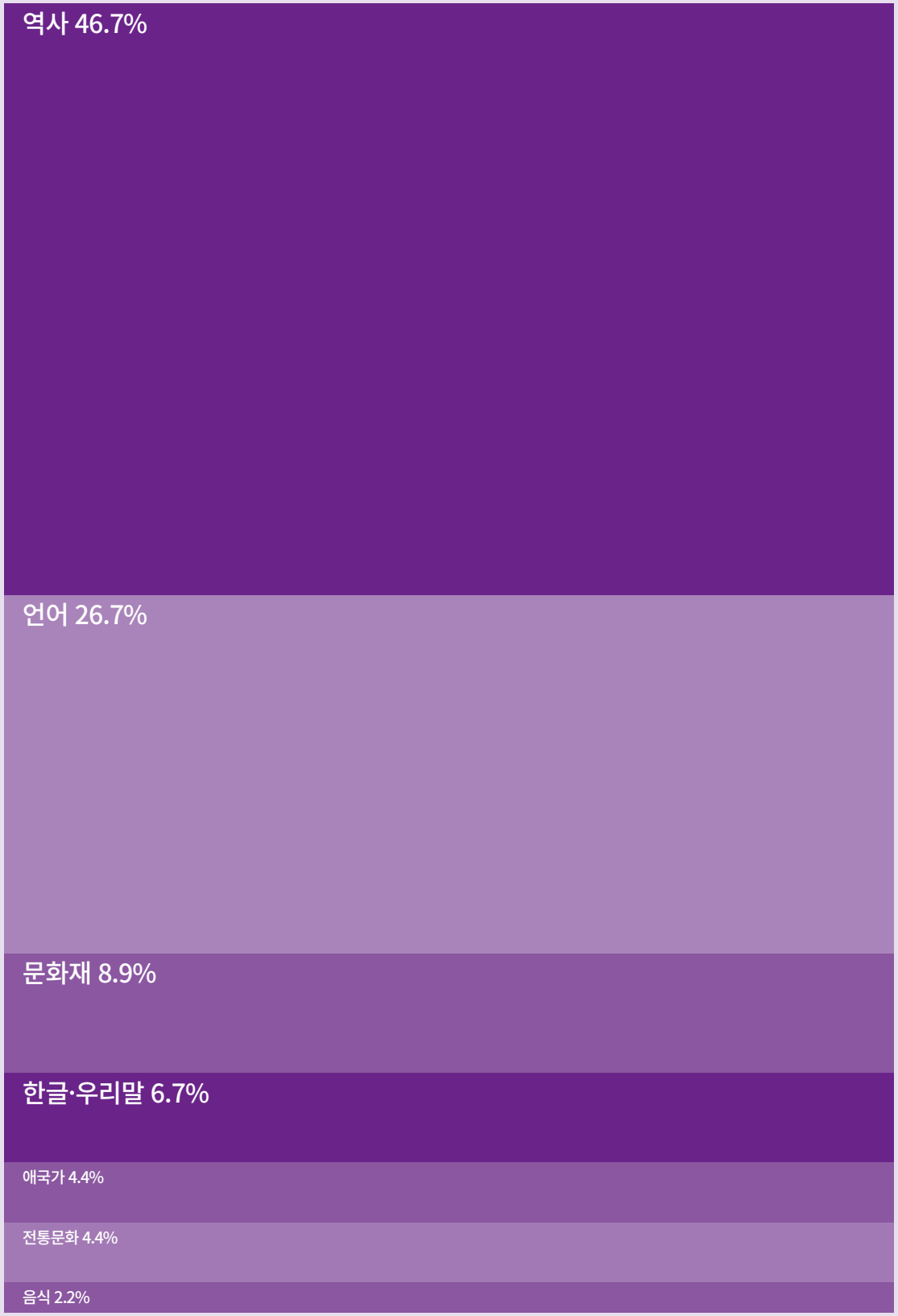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언론과 미디어가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강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언론사

- 언론은 왜 신뢰를 잃어가는 걸까요? (박상재)
- 왜 우리는 공정하지 못한 언론을 제어하지 못하나요? (정은영)
- 언론개혁, 최소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지 못하도록 언론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상걸)
-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인 막말, 언론의 거짓뉴스, 확대보도는 언제 고쳐질까요? (이승규)
- 진보종편은 왜 만들수 없나요? (정유경)
- 언론개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이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재경)
- 언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 하면 안됩니까? (김서유)
- 언론 삼진 아웃과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김현정)
- 언론 진실성이 보장된면 어떤사회가 될까요? (윤지나)

여론조사

- 왜곡되거나 선동적인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나요?(곽대종)
- 여론조사기관을 등록제에서 자격을 갖춘 기관만을 허가하는 허가제로 바꿀 법률을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웅희)
- 좀 더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를 가능케 할 기술적·사회적 장치는 없을까요? (정태윤)



전통과 정체성 질문 빈도 비율

전통과 정체성

'전통과 정체성'이라는 카테고리에 담긴 시민들의 질문은 한국 사회가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미래세대와 세계 속에서 어떻게 계승·발전시켜야 하는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역사 항목에서는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친일 잔재와 시중에 유통되는 역사 왜곡 서적, 그리고 한국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을 드러냅니다. 언어 항목에서는 한글과 우리말을 더 정확하고 쉽게 쓰기 위한 제도적 노력, 특히 일본식 표현이 남아 있는 헌법과 법전, 의학서적 등에서의 불필요한 외래어 남용을 지적하며 언어 주권과 표현의 민주화가 강조됩니다. 한글·우리말 항목에서는 전통 음식에 대한 영문 표기 방식조차도 단순히 외국인의 편의가 아닌 우리 문화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중도 유적과 하남의 매장문화재처럼 개발에 밀려 연구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과 문화유산 보전의 실질적 제도 보완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한글·우리말 항목에서는 우리 고전의 발굴과 번역을 위해 세대·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전 문화의 계승이 단지 학문적 일이 아니라 포괄적 사회 과제가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전통과 정체성'은 과거를 복원하거나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서, 현재 우리의 언어와 문화, 음식과 상징 체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집단적으로 되묻는 질문들로 가득합니다.

역사

- 지금이라도 친일 청산을 할 수 있을까요? (박정식)
- 역사 왜곡 서적은 왜 버젓이 팔리고 있을까? (홍창효)
- 우리나라 역사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을까요? (오홍영)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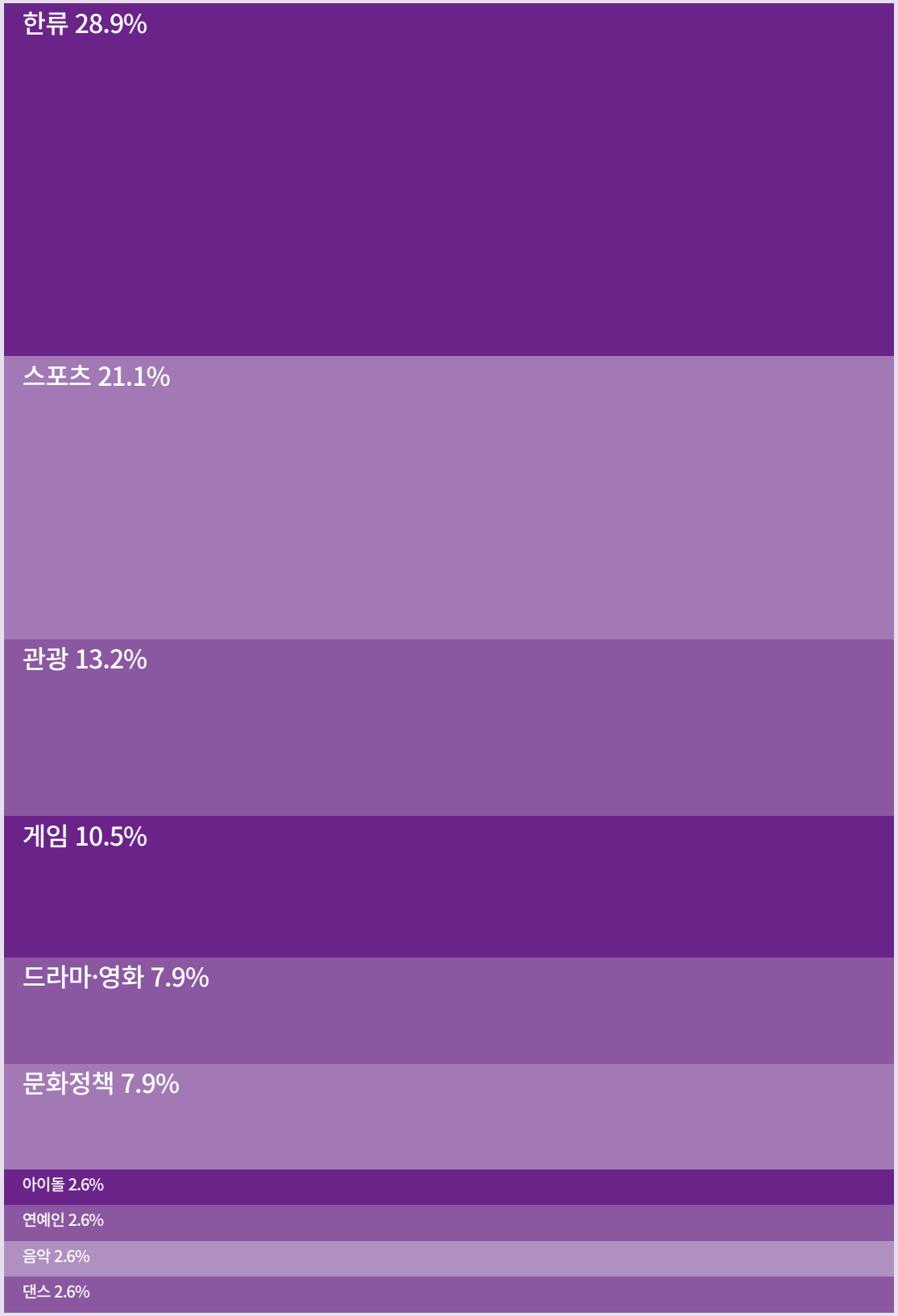
- 한글과 우리말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방건)
- 일본식 말법으로 어렵게 쓰인 헌법을 우리말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김회근)
- 우리말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한자,영어 등의 문자 사대에서 벗어나고, 많은 법전이나 의학서적 등이 쓸데없이 남용되는 한자나 영어보다 우리말로 적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하수환)

문화재

- 중도유적을 복원하고 연구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황부석)
- 하남의 매장문화재가 연구도 안되고 개발이 된다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심혁규)

한글·우리말

- 우리 고전을 발굴하고 번역하는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양성에 나이라는 유리천장을 깨야합니다. (오연주)



한류와 콘텐츠 경쟁력 질문 빈도 비율

한류와 콘텐츠 경쟁력

'한류와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한국 문화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 성과가 산업 전반에 균형 있게 확산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제도적·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한류 분야에서는 K팝, 한식,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세계 진출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암표 문제나 글로벌 인재 지원 부재 등 산업 생태계의 그늘도 지적됩니다. 아이돌 공연 티켓 암표 문제와 팬들의 호소는 공정한 문화 향유 권리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며, 한류를 단순한 외화벌이 수단이 아닌 문화 교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도 드러납니다. 스포츠와 관광 영역에서는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의 일관성, 체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요구가 나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낮은 재방문율, 과도한 숙박비 등은 한국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며, 인프라와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게임 산업에서는 여성 캐릭터의 성적 대상화 문제가 제기되며, 콘텐츠 윤리 기준과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드라마·영화 및 문화정책 분야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 이면에 있는 예술인의 열악한 생계와 생존권 문제가 부각되며, 공정한 보상과 지원 체계가 요청됩니다.

한류

- 한식 세계화를 위한 노력,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이명식)
- 한강 작가님 사례처럼, 한국인이 세계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게 지원과 혜택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윤상우)

스포츠

-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및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같은 공공 단체들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김승현)

관광

- 여행지 숙박비 이대로 괜찮은거 맞나요? (김도연)
- 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재방문율은 다른 관광 강국보다 현저히 낮을까?(김태주)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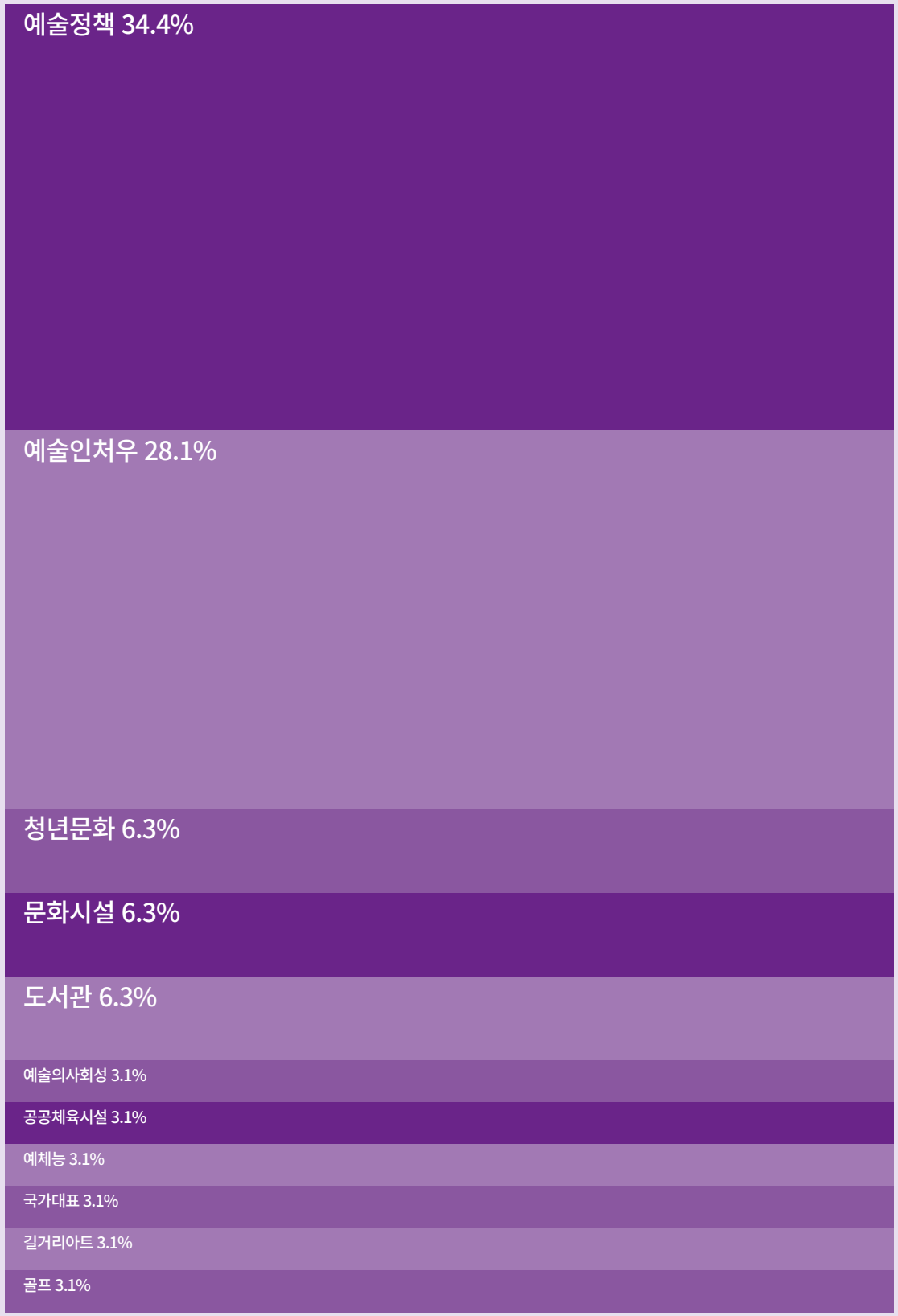
- 게임 속 여자캐릭터의 성적·성차별적 묘사를 규제할 수 없나요? 너무 유해합니다.(김연은)

드라마/영화

- 상위 1프로 이외 영화인의 대다수는 소리 없이 죽어갑니다. (김현근)

문화정책

- 덕지덕지 보기 싫은 간판들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박용진)



문화예술 지원 질문 빈도 비율

문화예술 지원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창작자 처우 개선, 문화 향유의 접근성 보장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술정책 영역에서는 창작자 중심이 아닌 관료적이고 형식적인 지원 구조, 장인문화의 쇠퇴, 문화부총리 신설 등 예술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됩니다. 예술인처우 항목에서는 프리랜서 예술노동자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특히 만화나 서비스형 예술 분야의 착취 구조에 대한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청년문화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세대의 감수성과 참여를 반영한 규제와 정책 설계가 강조되고 있으며, 도서관 대여 구조가 창작자의 수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문화예술이 단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 교육, 복지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재라는 인식 아래, 창작자 중심의 정책 전환과 함께 누구나 향유 가능한 열린 예술 생태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술정책

- 예술정책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추유선)
- 문화부총리를 만들어 주세요! (윤광식)
- 우리나라에는 왜 장인들이 점점 사라지나요? (CHOI HOUN JIN)
- 예술지원사업의 공모가 왜 서류전형으로 이루어지나요? (김남균)

예술인처우

- 예술, 문화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수 없나요? (김정민)
- 프리랜서, 예술 서비스 직군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김미선)
- 왜 만화분야는 산업화 될수록 창작자가 더 힘들어질까요? (최재정)

청년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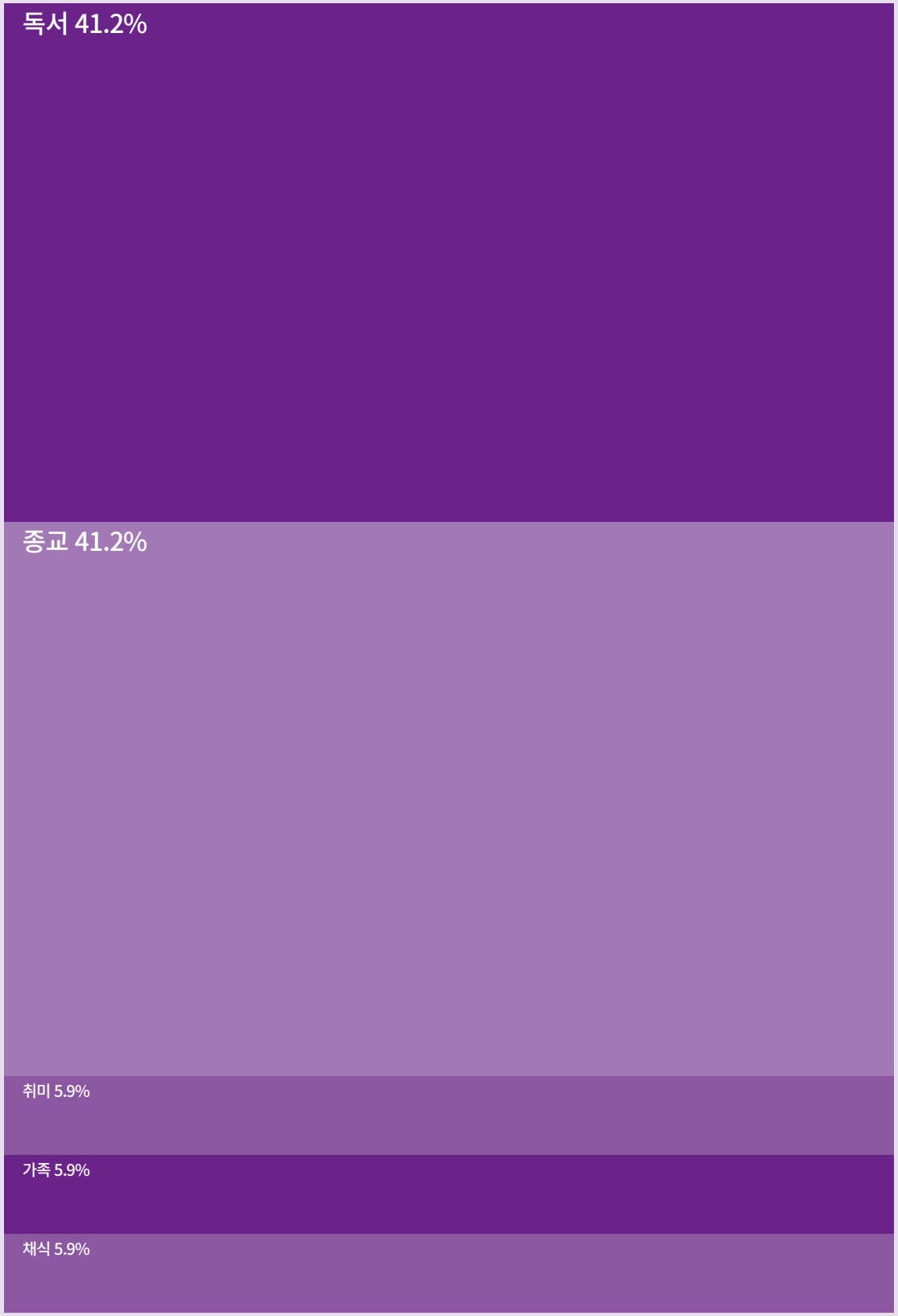
- 젊은 세대가 이용하는 문화는 그 세대가 직접 규정하고 동의하는 과정과 절차의 틀에서 규제되어야 한다 (박해준)

문화시설

- 근대 미술관이 없습니다. (정경진)

도서관

- 도서관들이 작가들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백철)



가치관과 삶의 방식 질문 빈도 비율

가치관과 삶의 방식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개인의 신념과 선택이 존중받고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독서 항목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일상 속에서 독서 문화가 쇠퇴하는 현실을 우려하며, 도서정가제의 타당성과 계층 간 문화자본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종교 영역에서는 사이비 단체에 대한 사회적 대응, 종교 간 갈등 완화, 제도적 관리 필요성과 같은 구조적 우려가 드러납니다. "종교에서 시작된 이념 갈등이 너무 심각한데 왜 각 종교 단체는 화합의 노력과 메시지가 없는 걸까?" 취미 생활에서는 올드카 문화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 문제, 가족 항목에서는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과 관련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며, 채식 항목에서는 일상과 여행 중 채식주의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배려와 인프라 구축 요구가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이 질문들은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는 다원적 사회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으며, 문화·제도·인프라 전반의 포용성을 높일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독서

-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튜브, OTT, SNS, 게임, 웹툰 등 온라인 세계에만 빠져 있는가? 독서는 왜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는가? (차동원)
- 도서정가제는 지금도 과연 필요한가요? (전성준)
- 계층 간 문화자본 격차 해소에 공공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배수인)

종교

- 종교를 제도 내에서 관리할 수는 없을까요? (이태훈)
- 종교에서 시작된 이념 갈등이 너무 심각한데 왜 각 종교 단체는 화합의 노력과 메시지가 없는 걸까? (김봉란)

취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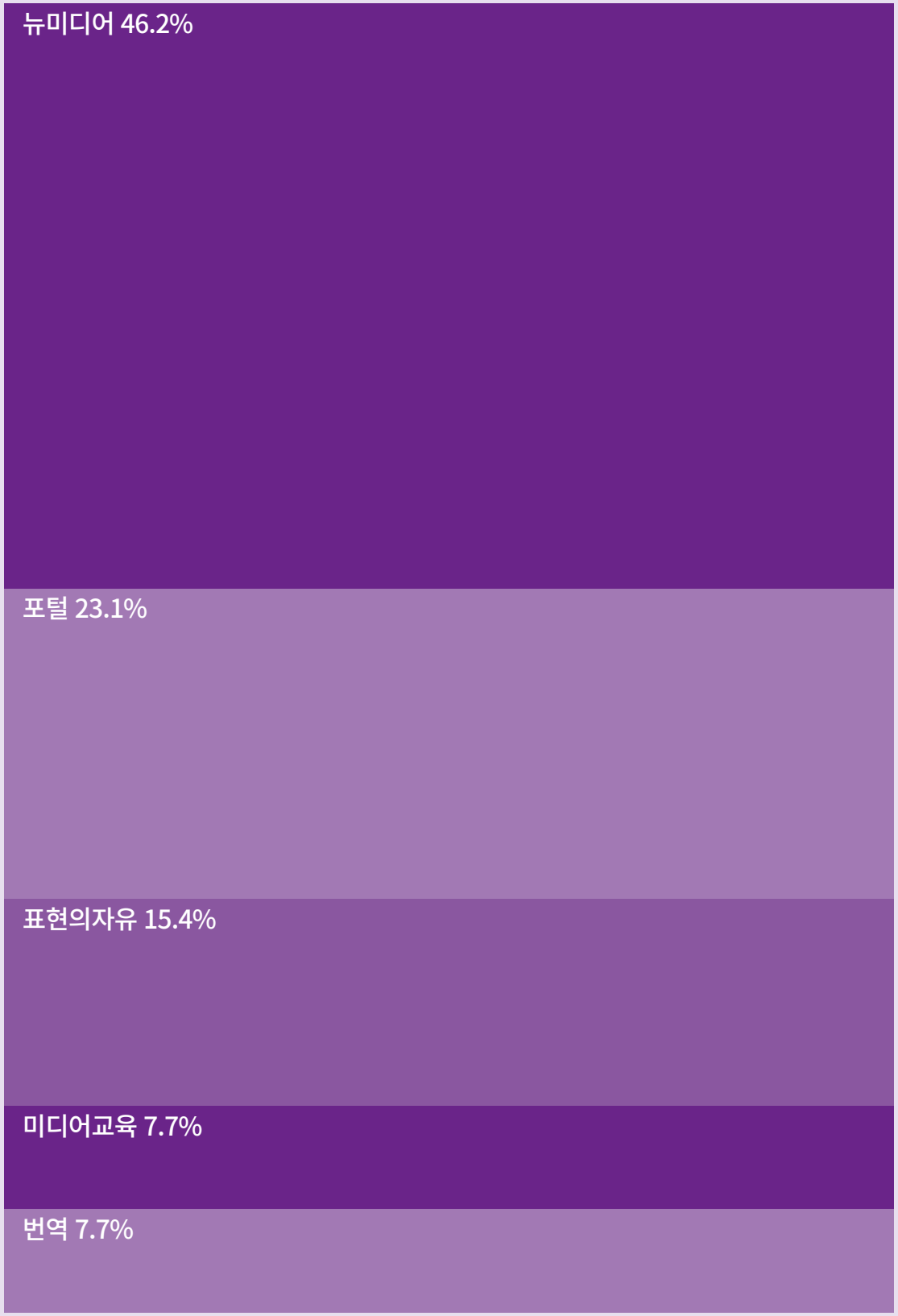
- 올드카에 대한 정의, 조건, 혜택 등에 관한 법이 왜 없나요? (신동호)

가족

-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합니다. (윤재복)

채식

- 채식주의자들도 편하게 여행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언제 올까요? (김유진)



미디어 리터러시 질문 빈도 비율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정보 과잉 시대에 정확한 사실 판단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허위 정보나 악의적 콘텐츠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 보장의 균형 문제가 제기되며, 공익 제보조차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표출됩니다. 포털사이트가 사실상 언론 유통의 중심이 된 현상도 문제로 지적되며, 공론장의 책임 구조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언제까지 포탈을 언론을 이용하는 창구로 사용하게 할 건가요?” 또한, 교육 현장에서는 미디어 교육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근본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동서양 고전이나 원전 번역의 부족 현상은 학술·출판 구조의 한계와 함께 지식 접근성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단지 미디어 기술의 문제를 넘어, 정보를 소비하고 해석하는 시민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미디어 환경 재정비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의 명암과 표현의 자유, 뉴미디어 관련으로 법안이나 이런 걸로 제재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혜지)
- 악의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들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로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요? (유재욱)

포털

- 언제까지 포탈을 언론을 이용하는 창구로 사용하게 할 건가요? (박상진)

표현의 자유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할 경우, 공익 제보와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김도영)

미디어 교육

- 미디어 수업은 득과 실 무엇이 더 많을까요? (이시호)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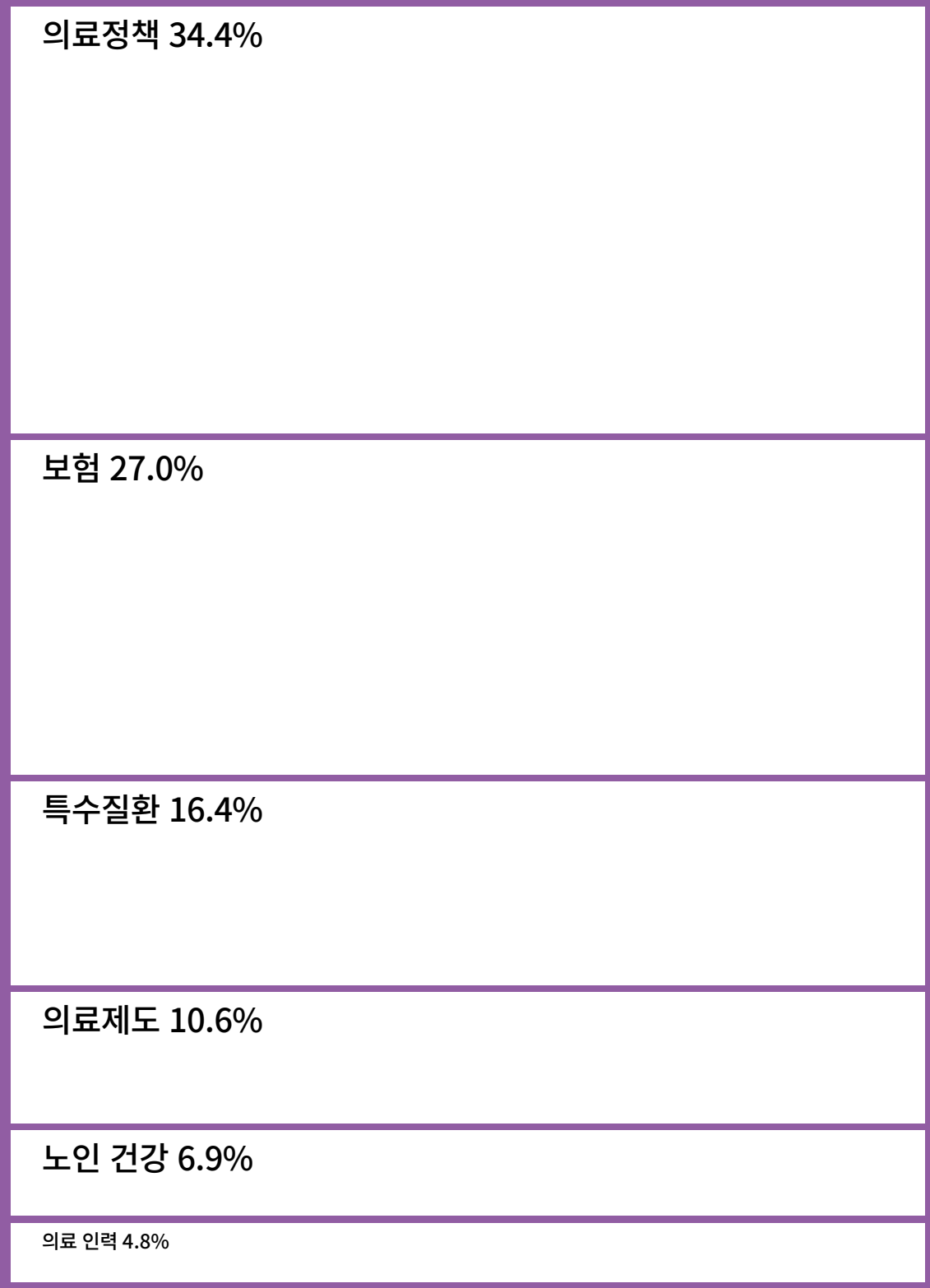
- 동서양의 원전이 한국어로 번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원전의 번역이 학자들에게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태형)

건강과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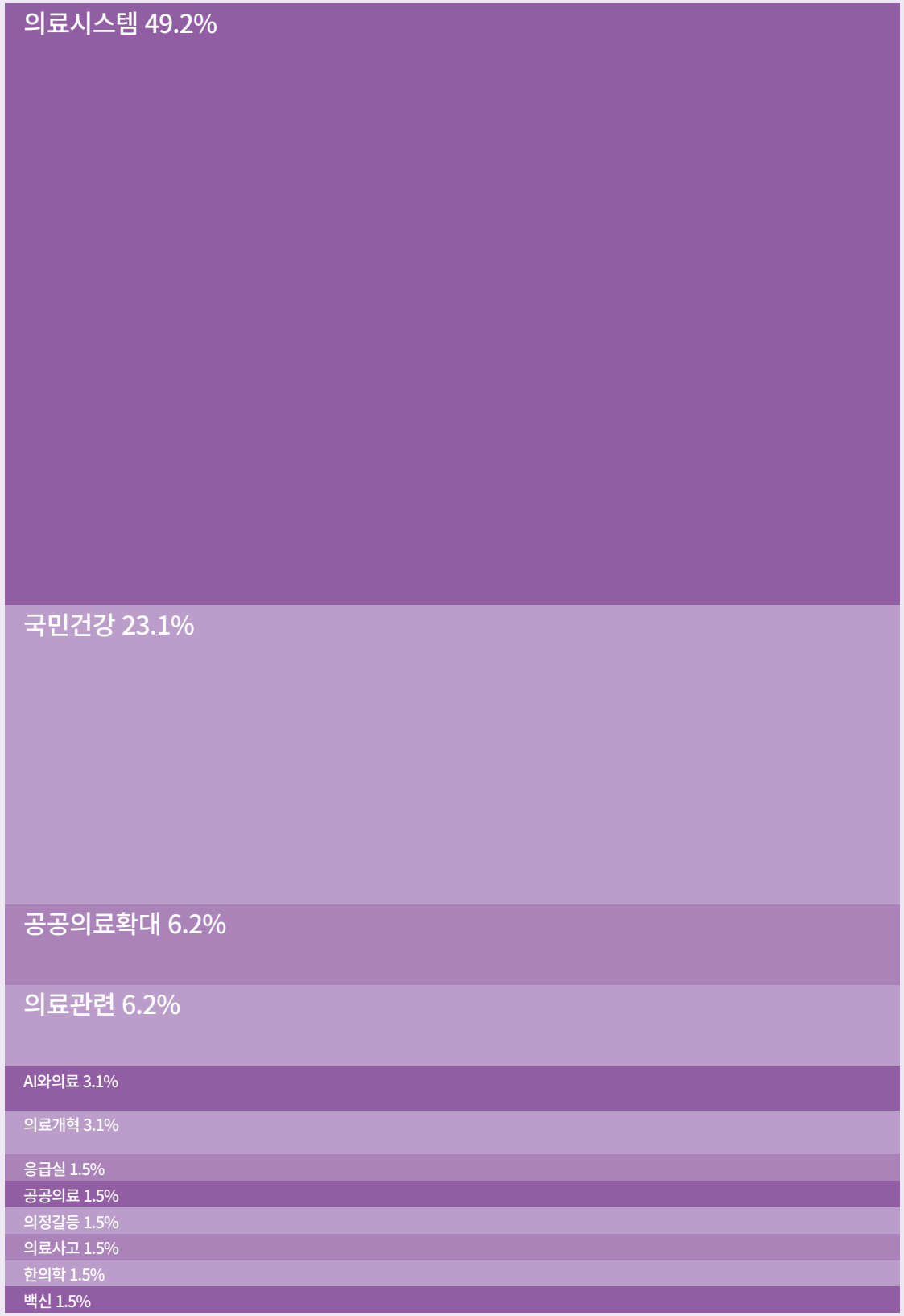
‘건강과 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의료를 삶의 질과 사회 신뢰를 지탱하는 공공재로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 제기를 담고 있습니다. 의료는 단순한 치료가 아닌, 예방, 돌봄, 형평성, 인간 존엄에 기반한 종합적 생태계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의료정책 영역에서는 중증외상센터, 필수의료 공백, 선택진료 과잉, 주치의제 미비 등 만성적 구조 문제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공공 거버넌스 강화와 민영화에 대한 경계가 함께 제기됩니다. 치료보다 예방, 병원보다 일상에서의 건강을 중시해야 한다는 생활건강·심리치료 중심의 전환 요구도 강하게 나타나며, 간호조무사의 역할 재조정, 의료단체의 책임, AI 기반 의료의 가능성과 한계, 침술사나 백신 부작용 같은 논쟁적 영역까지 의료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시민의식이 반영됩니다. 보험 제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국민 건강보험의 형평성 부족, 직장·지역 가입자의 차별, 퇴직자 보험료 급등, 민간 실손보험의 이중부담과 살인적 인상, 그리고 당뇨·암과 같은 만성질환자의 보험 혜택 문제까지 보장성과 공공성,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이어집니다. 특수질환 영역에서는 자폐, 경계성 지능, 치매, 비만, 암 등 다양한 질환이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다는 인식이 뚜렷합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흡연·도수치료 같은 일상적 건강 리스크에 대한 국가적 규제와 관리책임 확대가 요구됩니다. 어린이 건강을 위한 기본법 제정, 무료 심리상담 홍보,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등은 복지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촉구하는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의료제도 항목에서는 폐의약품 수거부터 건강기능식품, 의료범죄까지 의료산업의 윤리성, 관리 투명성,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제기됩니다. 특히 의료를 복지로 볼 것인가 산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고민은 이윤과 공공의 경계에서 의료가 가져야 할 윤리적 책임을 환기시킵니다. 노인건강 관련 질문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병원 동행, 방문진료, 장기요양제도 보완, 치매 가족 지원책 등 고령사회에 걸맞은 의료·돌봄 통합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단순한 진료 제공을 넘어, 존엄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인력에 대한 질문은 중증외상센터의 예산난, 간병인 급여화, 의료기피과 대책, 의사면허의 공개경쟁제 도입 논의까지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인력 구조 개편을 촉구합니다. 의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구조임에도, 인력 확보·배치·보상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정책 혁신이 절실함을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의료를 더 이상 일방향적 시혜나 시장의 논리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닌,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협력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적 기반으로 재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의료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며,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건강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임을 이 질문들이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강과 의료 질문 빈도 비율



의료정책 질문 빈도 비율

의료정책

'의료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한국 의료 체계 전반의 구조적 불균형과 사회적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의료시스템 항목에서는 중증외상센터, 필수의료 공백, 선택진료 과잉 등 만성적 문제들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민영화 우려와 공공 거버넌스 강화 요구가 동시에 제기됩니다. 국민건강 영역에서는 예방의료, 생활건강, 심리치료와 같은 '치료 이전의 돌봄'이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나타나며, 개인의 건강 유지 활동에 대한 공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공공의료확대와 의료개혁 항목에서는 주치의 제도의 도입, 지역 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 비인기 진료과 기피 등의 해소를 위한 구조적 개혁 요구가 등장하며, 단순한 정책 보완이 아닌 거시적 리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의 문제를 다룬 항목들, 예컨대 간호조무사의 면허 이슈, 의정 갈등, 의료사고 처리를 위한 입법 제안 등에서는 권한과 책임의 재조정,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의료인 간 협업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AI와 의료 항목에서는 미래 의료에서 인간 의사의 역할 재정립,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등 의료와 기술 융합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교차하며, 한의학과 백신 항목에서는 침술사 제도화, 백신 부작용 논의의 정상화 필요성과 같이 소외되거나 논쟁적인 의료 영역에 대한 공론화 요구가 드러납니다.

전체적으로 이 질문들은 의료를 '치료의 기술'이 아닌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공재'로 바라보며, 제도와 산업, 시민 감수성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스템

-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동욱)
- 중증외상센터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 조직하에 거점으로 각 도마다 하나씩 두고 소방, 군인처럼 사명감으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안되나요? (김양민)
- 왜?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중증외상센터 문제는 해결 되지 않고 반복되는가요? (오남기)
- 병원의 선택진료제도를 이용한 과잉진료 왜 방치되고 있을까? (강서규)
- 어떻게 하면 의료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수 있을까요? (박성범)
- 의료 민영화 수순인가? (박낙준)

국민건강

- 병원 의료지원과 동일하게 중요한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들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지재용)
- 진정으로 전국민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오봉규)
-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안상윤)

공공의료확대

-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단계적인 주치의제도 도입 방안은? (이재호)

의료관련

- 병원 정상화는 언제쯤 될까요? (이윤미)
- 실력 있는 간호사, 간호 조무사가 정식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는 없나요? (홍영표)

보험 질문 빈도 비율

보험

'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안전망으로서의 보험 제도가 과연 실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개선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항목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차별, 퇴직 후 보험료 급증, 통합적 관리 미비 등 구조적인 불균형과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음이 지적되며, 보장성 확대와 형평성 있는 제도 설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손의료비보험 항목에서는 국민이 이미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민간 실비보험에 또 가입해야 하는 이중 부담과, 살인적 수준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분노가 표현되며, 민간 실손보험 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보험 일반 항목에서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험 혜택 확대, 특히 당뇨환자의 연속혈당 측정기 지원 요구처럼 보장 대상과 범위의 현실화를 바라는 질문들이 등장하며, 암보험 등 민간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질문들은 국민의 질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로서 보험이 작동하려면, 공공성과 형평성,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유연한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주세요 (유신)
- 의료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할 수는 없는건가요? (김원용)
-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왜 차별이 있나요? (정명희)
- 퇴직자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증가 고민 해결 방안은? (남상성)

실손의료비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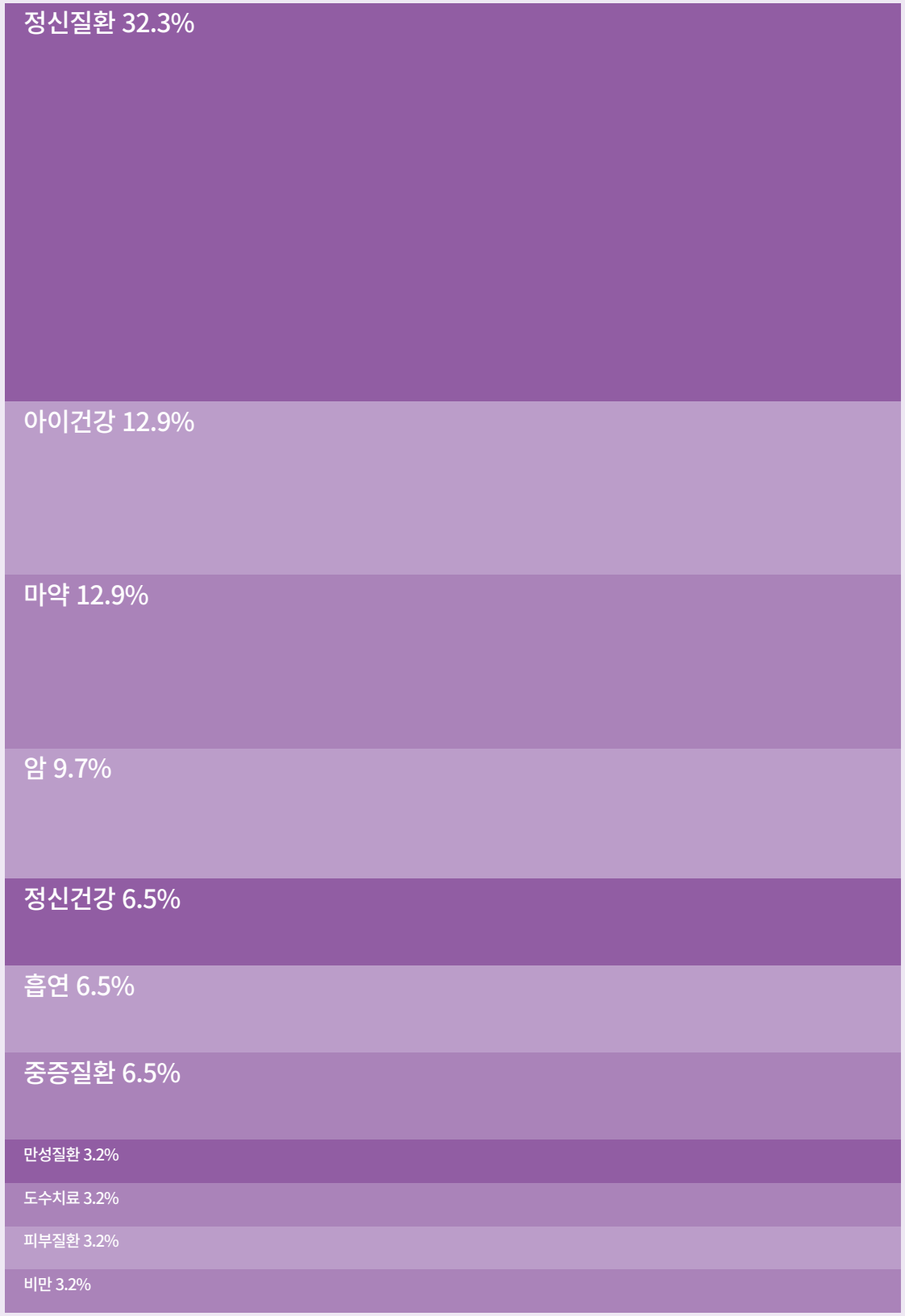
- 우리는 모두가 건강보험비를 내고 있는데 왜 또다시 실비보험을 가입 하여 이중지출을 해야하나요?
- 민간영리 실손보험의 문제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김대훈)
- 살인적인 실손보험금 인상 정치권은 왜 관심가지지않나요? (송인범)

보험

- 1형 2형에 관계없이 당뇨질환자로 판명이 되면 연속혈당 측정기 사용에 있어 보험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박은녕)
- 암보험 등의 일반 민간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산정되나요? (김명재)

의료보험

- 의료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효종)
- 여성 유방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도, 남성의 여유증과 마찬가지로, 보험 적용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류이현)



특수질환 질문 빈도 비율

특수질환

'특수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질환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포용적인 공공 정책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항목에서는 자폐성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돌봄·등록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지능이 65인 아이가 지적장애 등록이 거부당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제도적 공백 해소와 촘촘한 복지망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이건강 영역에서는 모든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종합 대책 수립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마약과 흡연 항목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와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특히 담배 정책에 대한 후진적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뚜렷합니다. 암과 중증질환 항목에서는 로봇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치료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등 생존과 직결된 실질적 정책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나타납니다. 정신건강 항목에서는 무료 심리 상담의 활용도와 정신질환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제도적 상상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결국 생애 주기 전반과 질환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현실을 드러내며, 의료의 형평성과 공공성, 그리고 취약 질환군에 대한 적극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 자폐성 장애인 돌봄 서비스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창교)
- 지능이 65인 아이가 지적장애 등록이 거부당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장원준)

아이건강

- 어린이 건강 기본법(모든 소아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완진)

마약

- 마약사범 형량을 높여서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고 음주운전도 척결합시다 (이경호)

암

- 민간 의료보험이 없는 저소득층은 중병 (암)에 걸리면 치료와 생계를 포기해야만 하는건가요? (유기선)
- 언제쯤 암환자의 로봇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될까요? (김경남)

정신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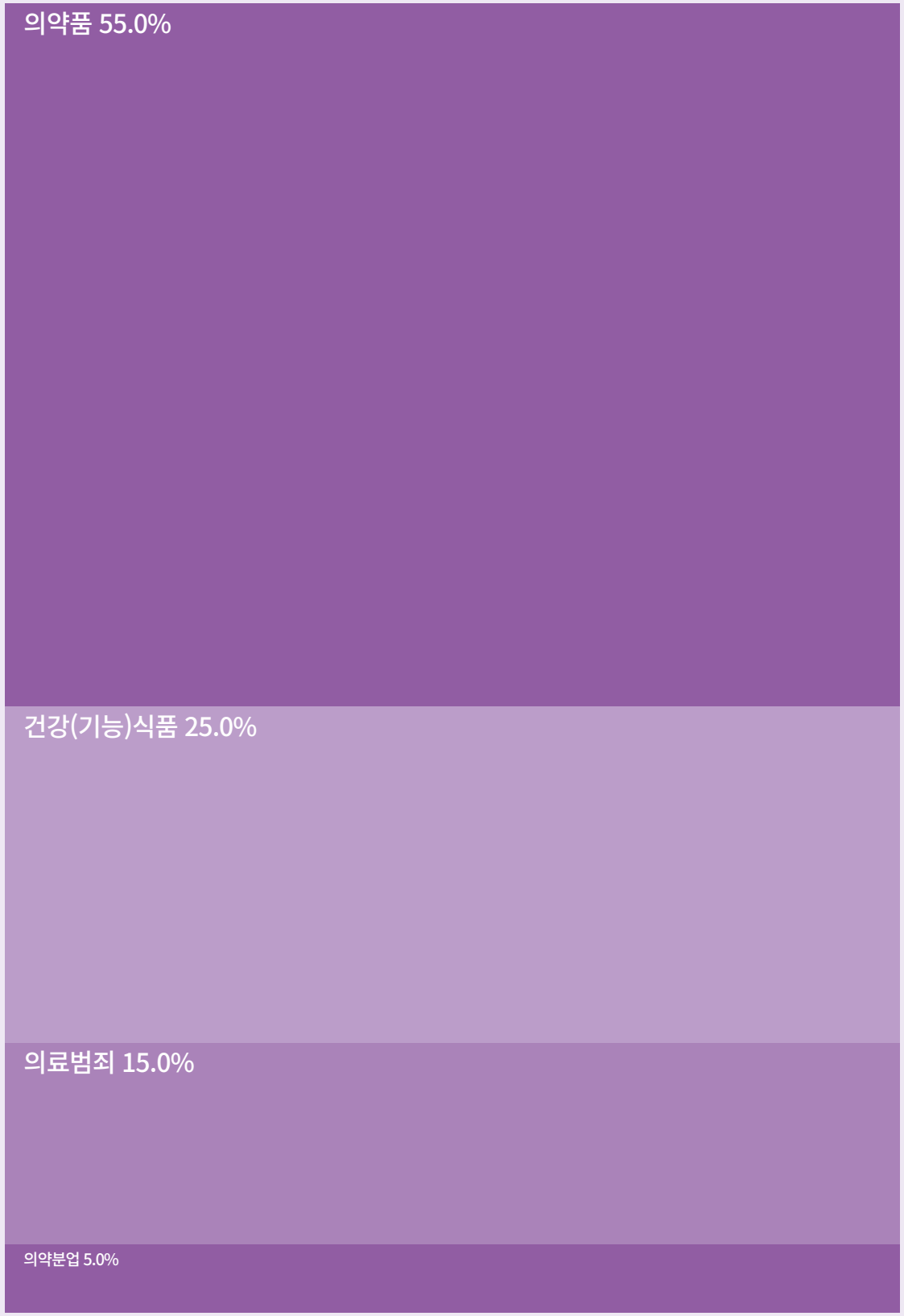
- 돈 안 드는 무료 심리 상담 나라50, 여가부 50 으로 운영되더군요. 홍보해 주세요. (최근애)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는 없을까? (김지수)

흡연

- 대한민국의 청소년 흡연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황종락)
- 대한민국은 왜 담배에 관해 이렇게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가? (이대영)

중증질환

- 불치병 환자의 의료비, 가족이 어느 순간까지 부담해야 할까요?(황성일)



의료제도 질문 빈도 비율

의료제도

'의료 제도' 분야의 질문들은 의약품 유통부터 건강기능식품, 의료인의 윤리와 제도적 감시까지 폭넓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먼저,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과 기초 의약품의 품절 사태 같은 공공성과 안전성이 직결된 문제에 주목하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도입 등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 처방 후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재와 감독 문제 역시 환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제기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해서는 효과와 가격의 적정성, 유통의 투명성 등 국민 건강을 둘러싼 정보 부족과 시장의 무분별한 팽창에 대한 우려가 나타납니다. 의료범죄와 비리에 대한 질문은 의료계 내부의 윤리 문제와 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며, 의료가 공공복지인지 산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합니다. 특히 의료인의 사적 이익이 국민 건강을 침해할 경우 이를 어떻게 감시하고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제도의 책임성과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국민의 건강권이 불필요한 구조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이 카테고리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친 투명성, 공공성, 책임성을 향한 시민의 강력한 요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약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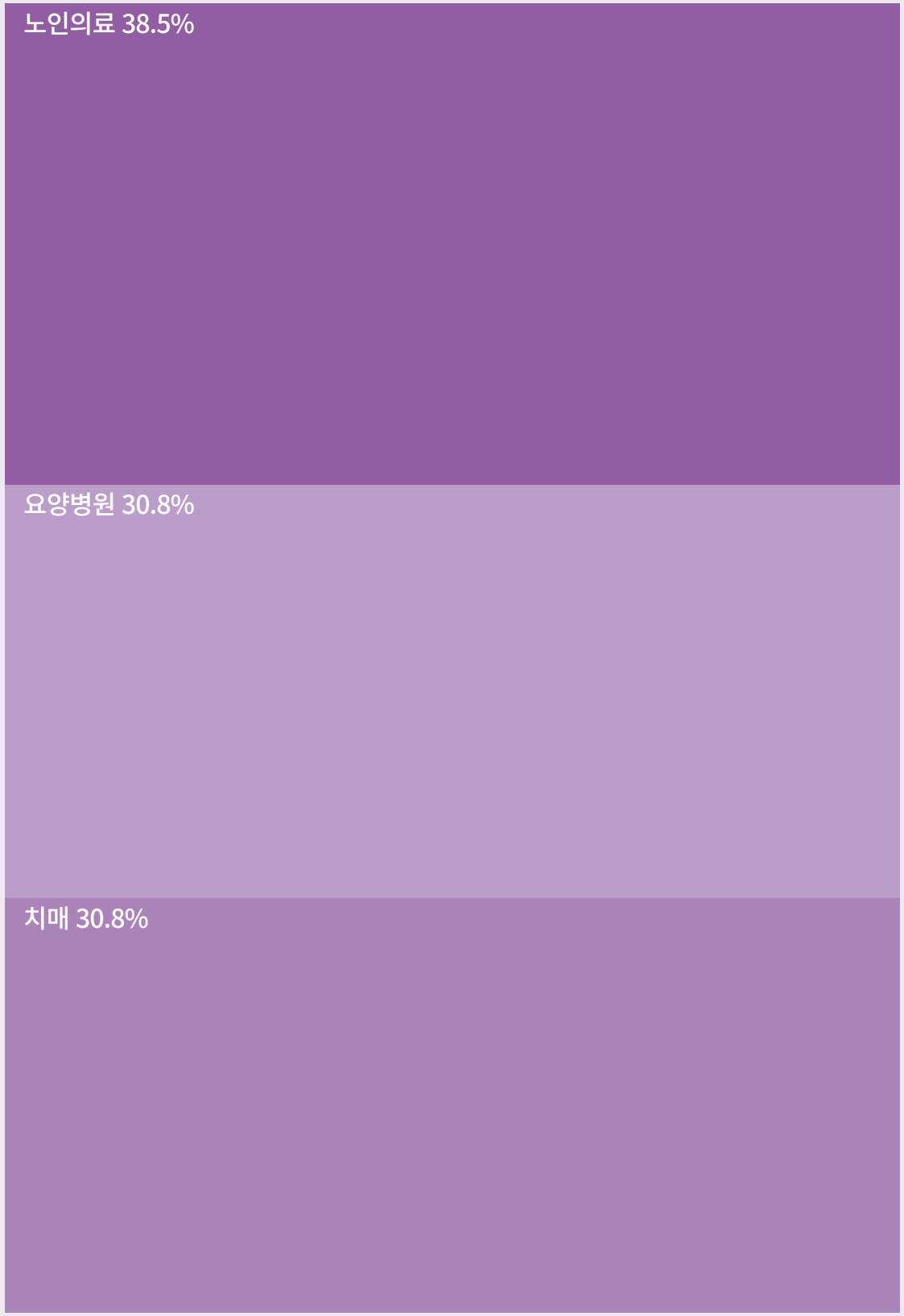
-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지하철 역사, 공동주택 내 설치 확대 및 폐의약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제안합니다. (지완진)
- 처방받은 약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를 위해 의사와 약 처방권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하나요? (홍유경)
-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의약품이 품절되는 건 큰 문제 아닌가요? (김종길)

건강(기능)식품

- 24년 건강식품이 어느날 수입품목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검색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죠? (장경순)
- 건강기능식품의 가격 적정한가요? 효과는 있는건가요? 건강기능식품 홍수속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장서윤)

의료범죄

- 의료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기관은 감독을 강화하고, 의료인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복기)
- 의료는 산업인가 복지인가? 의료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국민에게 사기를 친다면 누가 어떻게 그 사실들을 해결할수 있을까? (강성록)



노인 건강 질문 빈도 비율

노인 건강

'노인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의 의료 접근성과 돌봄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독거노인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나 의료진의 방문 진료 같은 지역 밀착형 건강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관련 질문에서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요양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가족 요양자의 법적 권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함께 제안됩니다. 또한 치매 항목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조기 치료 가능성과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타납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노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공공 돌봄 체계 구축과 가족의 부담 분산을 포함한 전사회적 관심과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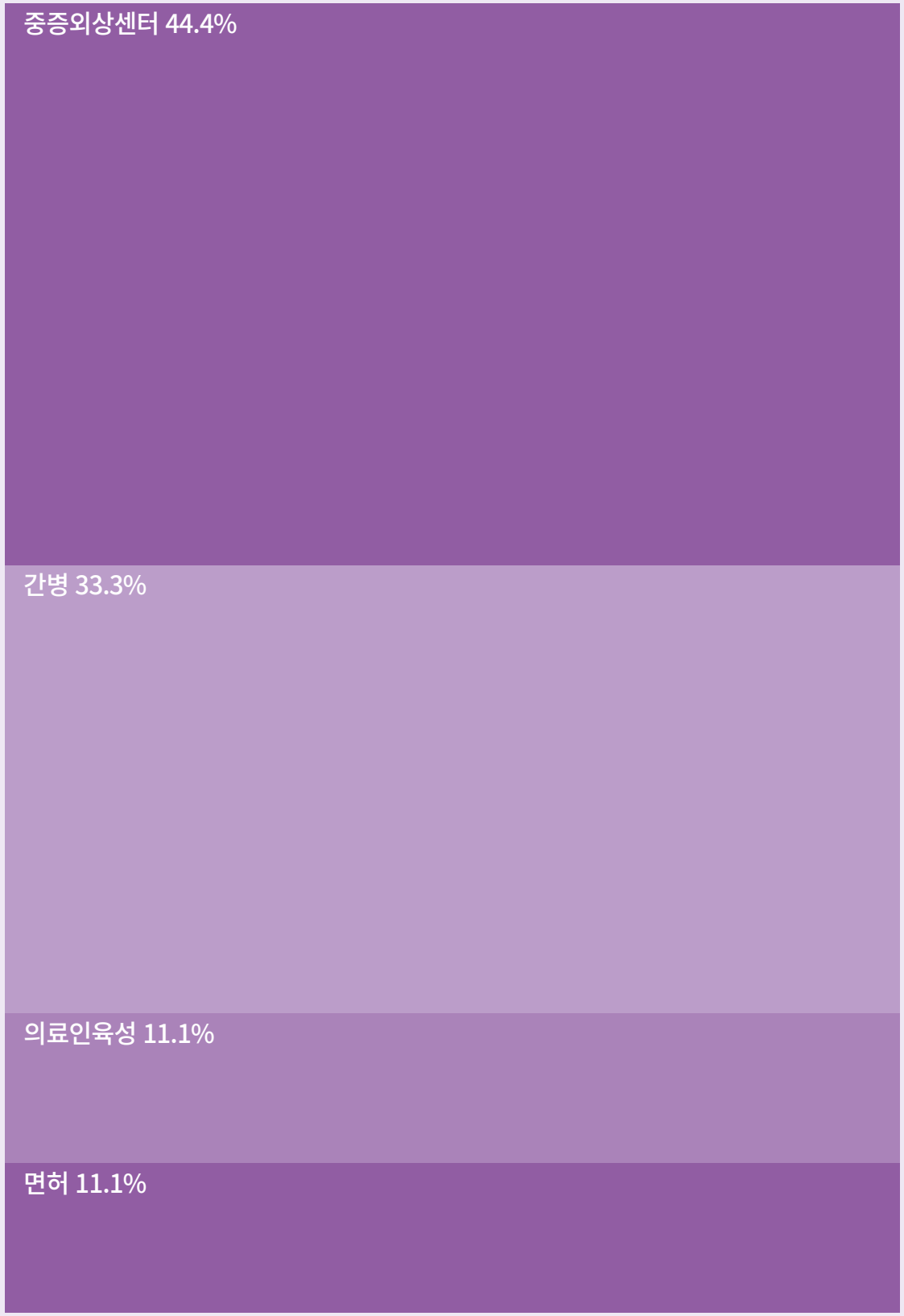
- 실비보험이 없는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서영민)
- 지역에 독거노인들과 병원에 함께 갈 봉사자나, 거동이 어려울 땐 의료진의 방문 진료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희)
- 내 노후는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최가라뫼)

요양병원

- 안심하고 요양원·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국가가 나서주세요! (이상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 중인 요양보호사는 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나요? (황건택)
- 베이비부머 끝단인 나의 노후는 요양병원이 최선일까요? 20~30년 후 요양병원 질은 현재 정도라도 유지될까요? (최문희)

치매

-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치료제 쓸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유연재)
- 치매환자를 둔 가족을 위한 혁신적인 국가차원의 대책이 있나요? (지정구)
- 치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위한 정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유재준)



의료 인력 질문 빈도 비율

의료 인력

'의료 인력'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필수의료 인프라의 붕괴 위기와 의료 인력 확보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 항목에서는 소수 생명을 살리는 중대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문을 닫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됩니다. "중증 외상 수련센터가 예산 9억 원이 없어 문을 닫을 예정이라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간병 항목에서는 간병 노동의 공공화와 국가 책임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며, 돌봄의 부담을 가족 개인이 전적으로 짊어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의료인 육성과 관련해서는 특정 기피 전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인책 및 정책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면허 항목에서는 의사·약사 면허 제도의 폐쇄성과 진입장벽을 지적하며 보다 개방적인 자격 취득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필수 의료 인력을 국가가 어떻게 확보·배치하고,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면허·보상 체계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

- 예산 9억 원이 부족해 중증외상센터가 문을 닫는다니, 이게 맞는 걸까요?(최준호)
- 대한민국은 준 전시상태의 국가이며 중증외상은 이런 상태에서는 군은 중증외상에 대한 대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옥)
- 아직도 중증외상센터 지원은 뒷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형섭)

간병

- 간병인 급여화는 가능한가요? (박원중)
- 간병을 국가가 보조 or 책임질 수 없는가? (안상학)

의료인육성

- 의료 기피 학과 문제 해결 의견 제시합니다. (이만구)

면허

- 왜 의사면허시험 약사면허시험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전공에 상관없이 공부해서 취득할 수 있는 공개경쟁시험제도로 만들지 못하는 것알까요? (김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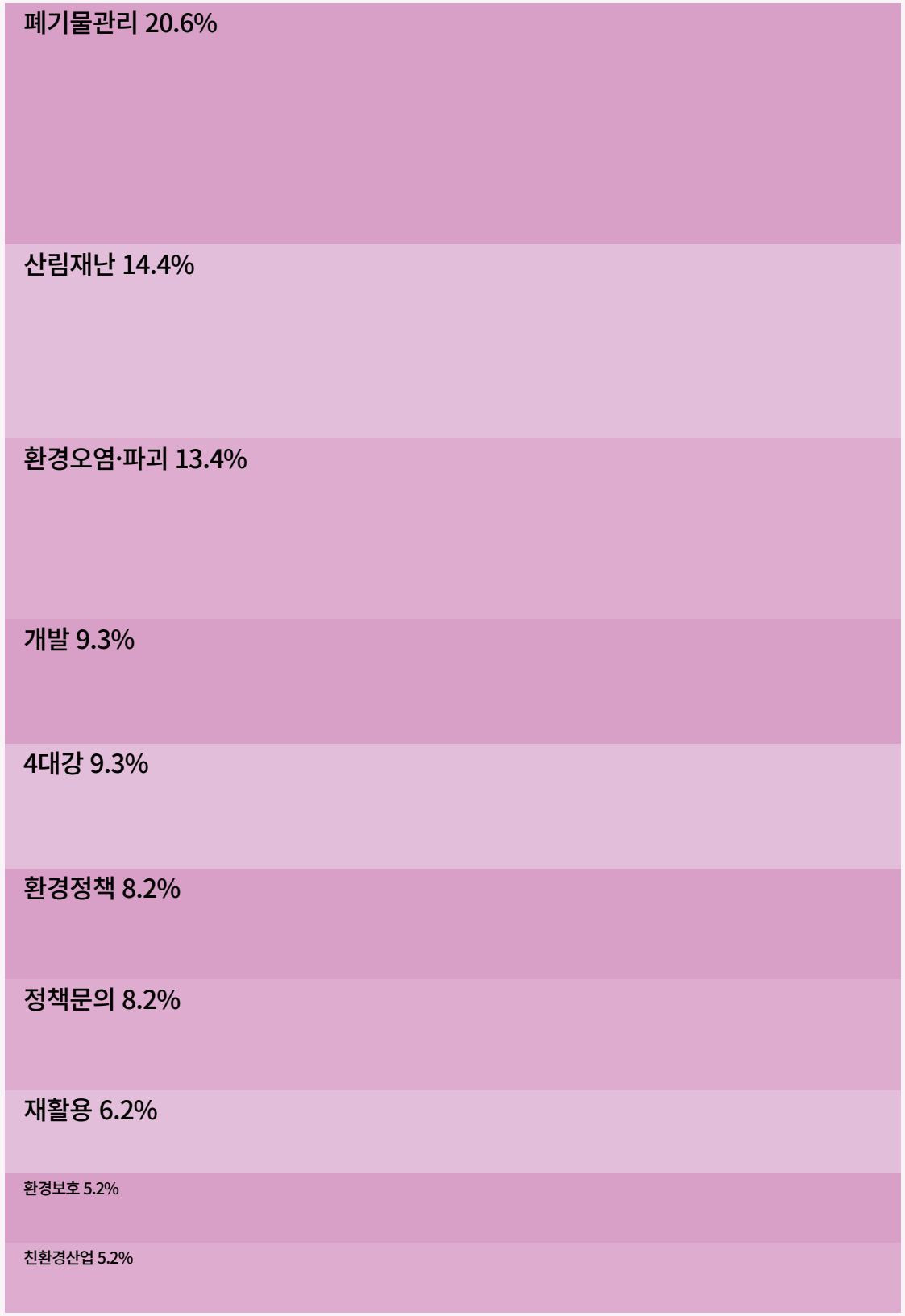
환경 및 기후변화

‘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시민들의 질문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서, 국가의 생존 전략과 사회의 구조적 재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은 산불, 홍수, 미세먼지, 원전 오염수, 폐기물 처리 등 생활과 직결된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을 지적합니다. 4대강 보 철거 지연이나 무분별한 개발 정책은 환경 파괴와 생태계 불균형을 방치한 채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정만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체계의 허술함은 지역 불평등과 일상의 불편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영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최하위인 현실을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과 산업 전략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닌, 에너지 거버넌스의 재편과 분산형 시스템 구축,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활용에 대한 합의가 요구됩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한국이 더 이상 ‘기후 악당’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정권을 초월한 일관된 정책 추진과 국가 단위의 기후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식량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과 농촌을 생존 기반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규제나 분리수거, 리필샵 활성화 등 자원순환 정책에 있어서도,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방식 대신 시스템 중심의 접근과 실효성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시민들은 환경을 단지 한 정책 분야가 아닌, 경제와 산업, 복지와 도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 기준으로 인식하며, 이제는 생존과 지속가능성의 문제로서 전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환경과 기후”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며, 단편적 규제가 아닌 정치, 경제, 산업, 도시, 복지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하자는 시민사회의 공동요구임을 보여줍니다.

환경 및 기후변화 질문 빈도 비율



환경정책 질문 빈도 비율

환경정책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일상의 안전과 생존의 기반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환경을 바라보며, 각종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생태적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형산불은 명백히 기후 위기의 결과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산불 진화용 항공기 부족 및 노후화와 부품 수급 문제,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라는 질문, 인공조림의 효과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됐습니다. 폐기물관리 항목에서는 산업 폐기물, 폐어구, 농촌 유입 쓰레기 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제도적 사각지대와 감시 부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파괴 분야에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자동차 매연, 녹조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오염 이슈에 대한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환경'이 단지 하나의 정책 부문이 아니라, 안전·경제·도시·에너지·복지 등 전 영역을 관통하는 사회적 기준이자 윤리적 책무임을 보여줍니다.

폐기물관리

- 해양 미세 플라스틱 주요 원인인 폐어구 문제 중요합니다. (지완진)
- 농촌 폐기물 시설 문제, 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까요? (JinWooKim1000)

산림재난

- 산불 진화용 항공기 부족·노후화와 부품 수급 문제, 방치해도 되나요? (임강호)
- 재난 대비를 위한 예비 인력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것 같아요. (정승인)

환경오염/파괴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후에도 우리가 먹는 국산·수입 해산물은 안전한가요?(도경화)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박은영)

개발

- 무분별한 개발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진행되어야 할까요? (박선희)
- 새만금 간척 개발 30년 평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이경미)

4대강

-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방법을 연구해주세요 (김혜진)

환경정책

- 산불, 홍수 등 재난에 대비해 모든 주택의 화재보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신동호)
- 환경 보호를 위해 규제를 받는 지역은 왜 낙후된 채로 살아가야 할까요? (배명순)

정책문의

- 라돈 오염 사각지대(지하 휴게실·전기·기계 설비실) 관리가 시급합니다. (지완진)
- 세상의 모든 스티커는 잘 떨어지게 만들자. (김석철)

재활용

- 현재 진행중인 분리수거 재활용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김창희)
- 페트병 랩핑한 부분을 벗겨내는 게 왜 이리 어렵나요? (변희원

에너지전환 질문 빈도 비율

에너지전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단순한 기술적 대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체계 전반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 구상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재생에너지 항목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전환이 단순히 환경 보호의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패권의 핵심 전략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좌파, 우파가 왜 필요합니까? 재생에너지, 환경문제를 넘어선 글로벌 제조업 패권전쟁입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발전·송전 간 불균형 문제 해결과 정책 책임의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비중이 겨우 5~6%로 OECD최하위로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는 기술보다 실행 의지와 정책 설계 역량의 부족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너지전환 부문에서는 '그리드 패리티'(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 확보) 도달 가능성과 이를 방해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에너지 거버넌스의 근본적 재편과 분산형 전력 생산 모델, 다양한 신기술의 결합을 통한 자립형 시스템 구축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되며, 이는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전환 이후의 질서'까지 상상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원전과 관련된 질문들은 경제성, 안전성, 국제 경쟁력 등을 둘러싼 논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은 원전 지원 정책의 과도한 재정 집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원전 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는 원전이 재생에너지와 어떤 균형 속에서 미래 에너지 믹스를 구성할 수 있을지를 묻는 복합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항목에서는 고속도로 일직선 라인 활용, 절대농지 활용 문제 등 태양광 설비 확대에 있어 부지 확보와 환경 규제 간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실용적 아이디어와 제약 요인 분석이 이어집니다.

시민들은 에너지를 '공공재이자 전략자산'으로 바라보며, 기술-정책-사회 간 조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에너지 체계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 대한민국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비중이 겨우 5~6%로 OECD최하위로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소미경)
- 재생에너지 생산과 송전선로 문제,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요?(이경미)

에너지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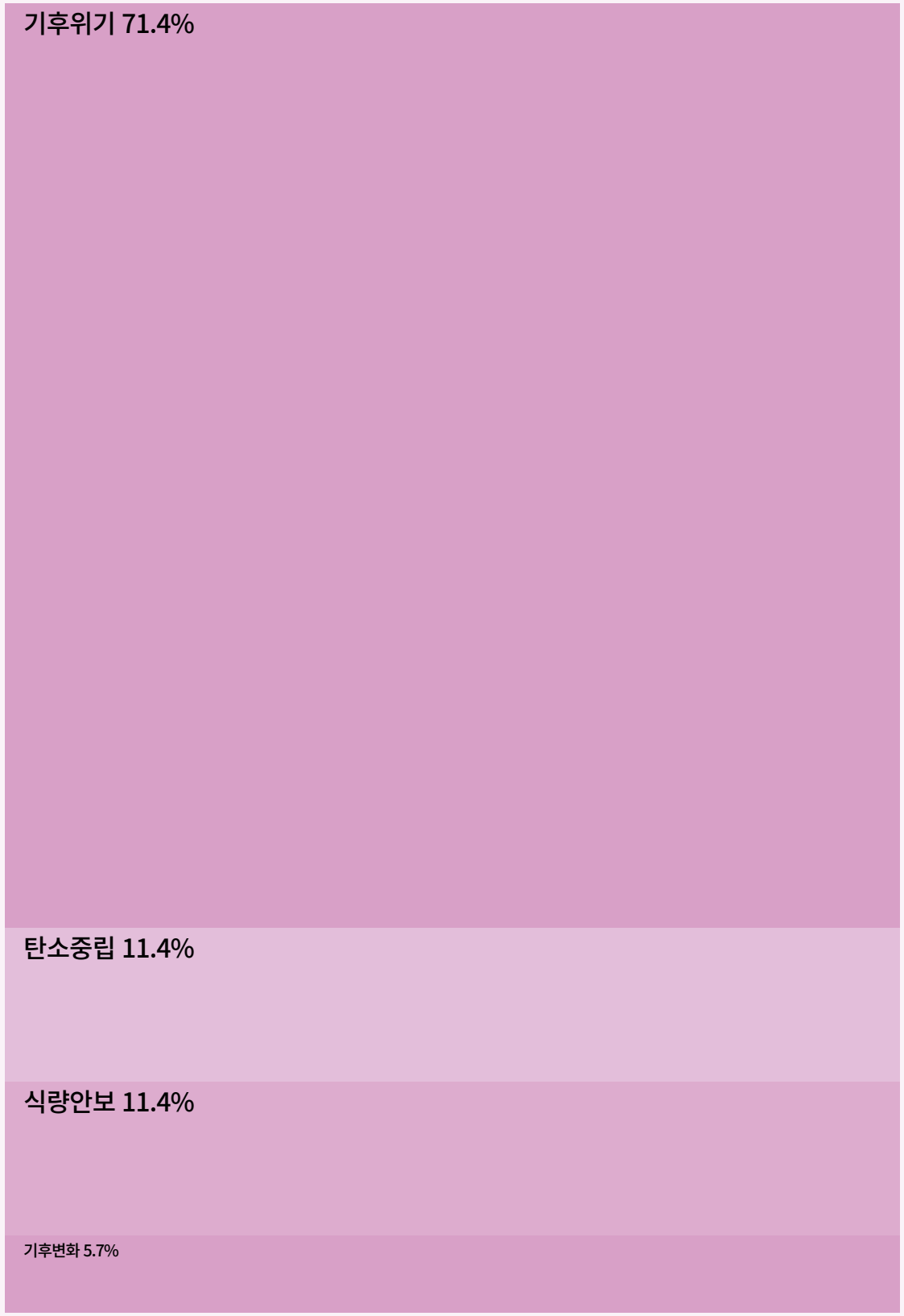
- 한국전력시장은 언제쯤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그리드패리티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소미경)
- 태양광, 수력, 풍력, 압력, 진동 등의 모든 전기 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독립적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김동준)

원전

- 천문학적인 원전 지원 사업! 이대로 좋은가? (김명웅)
- 원전은 왜 나쁘고 위험하다고만 할까요? (신윤식)

태양광

- 태양광 설치 위치를 전국 고속도로 일직선 라인으로 설치하면 안될까요? (김윤)



기후 위기 질문 빈도 비율

기후 위기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더 이상 막연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과 연결된 시급하고 구체적인 대응 과제를 반영합니다. 이 질문들은 기후 위기를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개발 방식, 정책 일관성, 식량 체계, 에너지 구조, 생태 거버넌스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구조적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항목에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의 임계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난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짙게 드러납니다. 시민들은 국가 차원의 실질적 대응 의지가 부재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기후 악당'으로 낙인찍힌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관련 질문들은 목표 설정의 문제를 넘어, 그 실행을 뒷받침할 정치·행정 시스템의 일관성과 지방 분권형 이행 전략에 주목합니다. 장관직 직선제나 에너지부 신설 제안은 탄소중립을 단기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국가 목표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탄소 크레딧 시장을 통한 지역경제 순환,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 기반 정비 등은 제도적 수단과 국민 체감형 혜택 설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식량안보 항목에서는 기후 재난이 곧 식량 위기로 직결된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농촌과 농업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 농림부의 위상 부족, 식량 자급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식량을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담당할 국가 전담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농업 정책을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닌 생존 기반 전략으로 다뤄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항목에서는 기후 대응을 위한 실용적 접근이 강조됩니다. 산림정책의 전환, 재해 대응과 생태 회복의 균형, 사회 전체가 합의 가능한 우선순위 설정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관련 질문들은 생존과 공존을 중심에 둔 국가 전략, 그리고 중앙과 지방, 정부와 시민이 함께 실천 가능한 정책 틀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시대적 합의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후 위기

- 이제 0.5도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성수아)
- 어쩌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기후 악당 국가가 되었는가? (황민수)

탄소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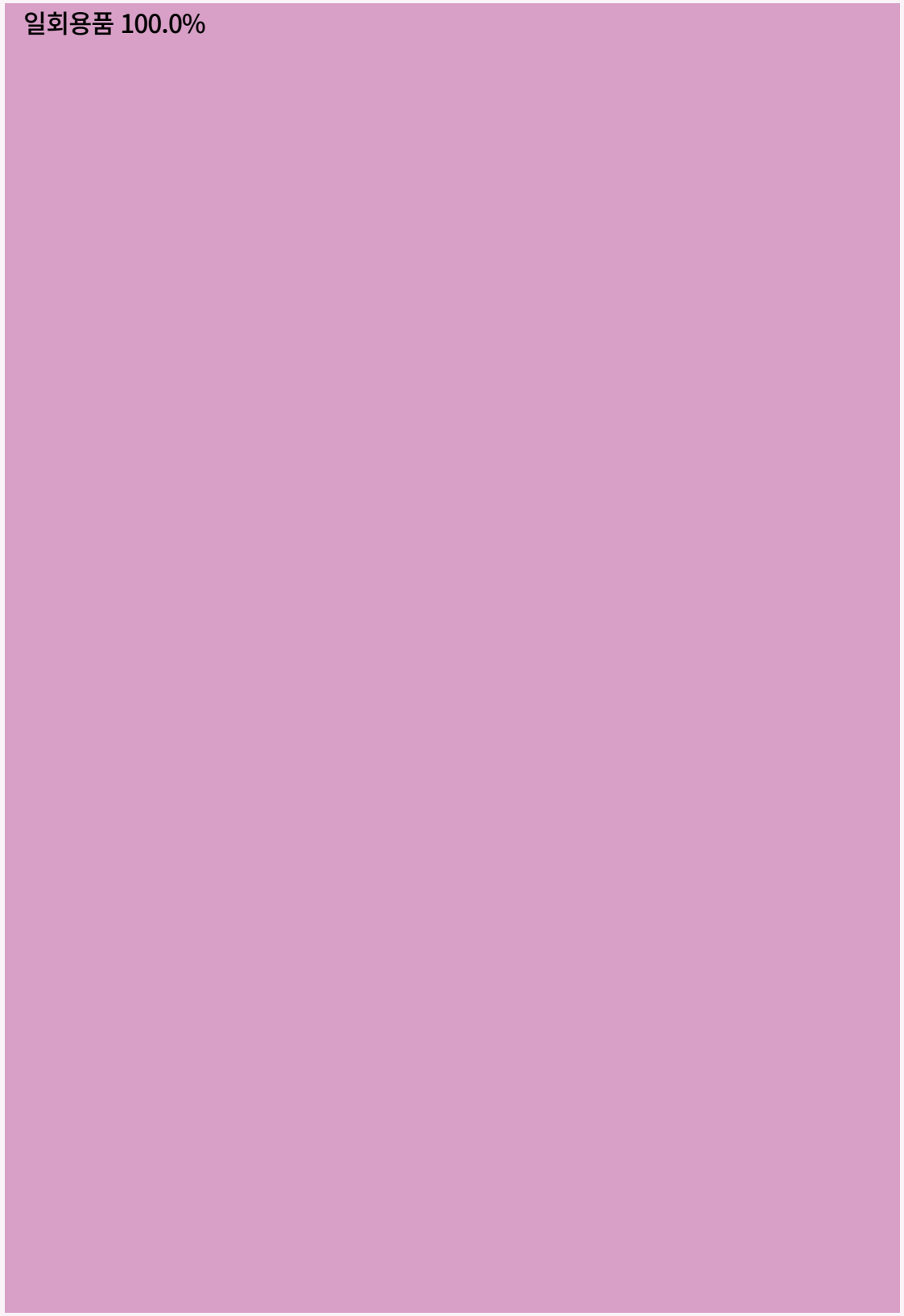
- 에너지부 장관직 신설, 직선제,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성있게 2050 탄소중립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구강영)
- 탄소중립과 RE100 관련 대책수립 및 성과는 너무도 미흡하여 미래가 암담한 지경인데, 에너지정책을 향후 어떻게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인가? (윤철원)

식량안보

- 기후변화의 시대, 앞으로는 식량이 무기가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농촌문제를 강건너 불 보듯 하고 있나요? (곽정인)
- 기후 재난이 매년 올거라고하고 그에 따라 식량안보도 현실화 되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부총리급 부서로 격상시키는건 어떨까요? (도완영)
- 미래 식량 안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현이)

기후변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실행할 실용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승현)
-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태관)



자원순환 질문 빈도 비율

자원순환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된 국가 정책의 일관성 부족, 그리고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회용품 항목에서는 자영업자와 시민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정부의 규제 방향이 일관되지 않거나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 속에서 개인의 책임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 규제를 넘어서 다회용품 사용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인프라와 유인책, 그리고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환경보호’라는 당위에 기대기보다는 현실과 호흡하는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 일회용품 정책이 오락가락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철홍)
- 일회용 커피컵 대신 다회용 텀블러를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더 많이 찾고 적용하면 어떨까요? (마상욱)
- ‘개인 선의’ 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무는 순환경제 정책으로는 앞으로도 요원할 수 밖에 없다. (hooponopono7942)
- 장례식장 일회용품_돌아가시는 분의 입장에서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남기고 돌아가시고 싶으실까요? (김정화)
- 우리나라도 일회용 음료용기 재활용 보상 시스템을 도입할 순 없을까요? (김정화)
- 2025년 내 환경부_화장품 용기, 액체 식품류 용기 100% 재사용 방법 도입 및 시스템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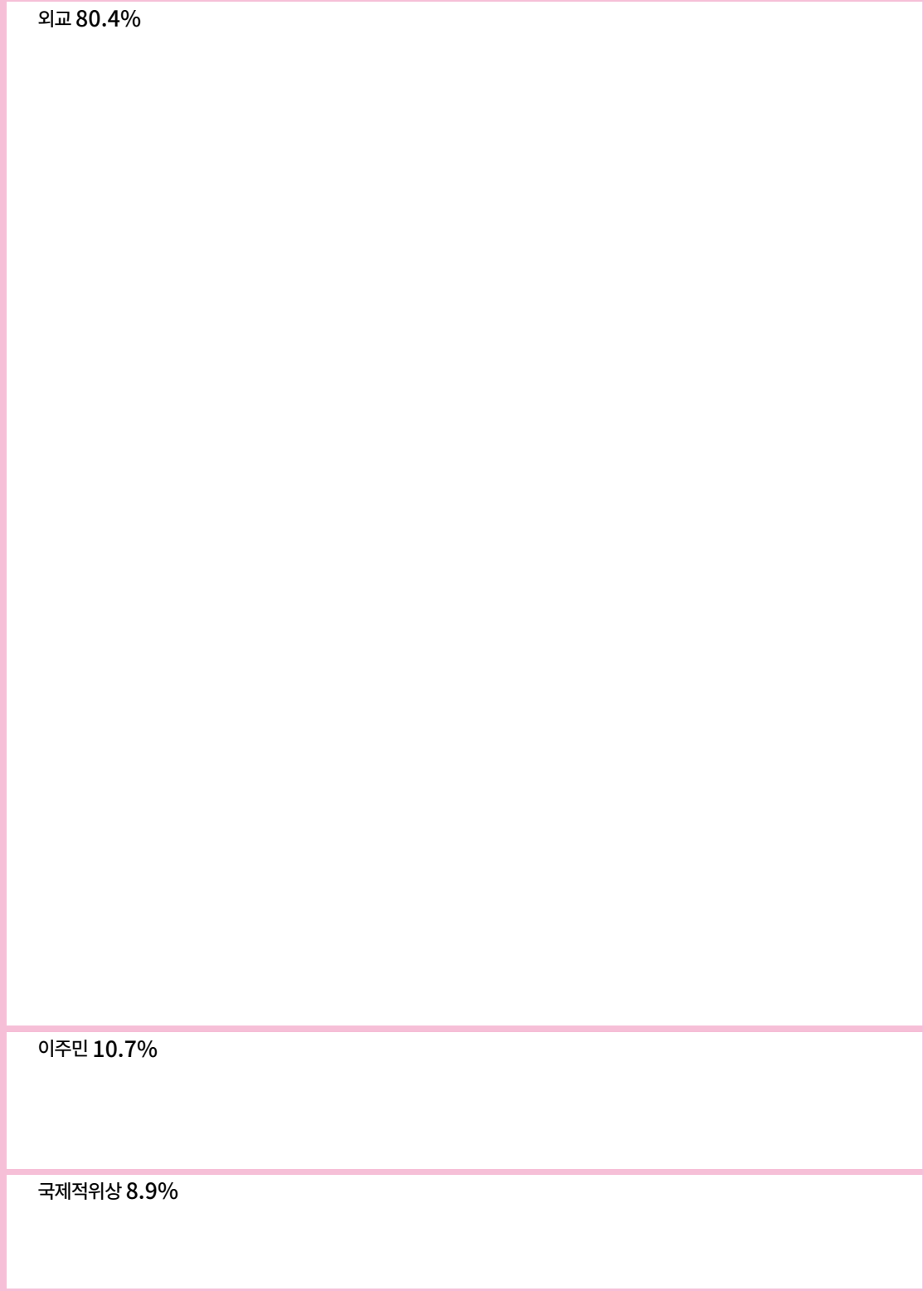
국제관계 및 외교

‘국제관계 및 외교’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복잡해지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 이주민 정책,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근본적 방향에 대해 성찰하고, 더 책임 있고 실용적인 국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중동,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 외교의 필요성과 함께, 무기 수출이나 역사왜곡, 외국인 체류 정책 등 윤리성과 형평성, 일관성을 갖춘 외교 전략 수립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집니다.

방위비 분담이나 북미 수교 활용,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응 등에서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AI 시대의 역사왜곡 대응이나 이스라엘 무기 수출 문제 등에서는 기술적·윤리적 기준과 외교의 일관성이 강조됩니다. 이주민 분야에서는 해외동포의 귀환, 재외공관의 책임, 국적 제도의 유연성, 재외국민 복지 등 대한민국을 글로벌 정주 사회에 걸맞는 포용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시민들은 이중국적 허용과 병역 의무의 균형, 해외 교민에 대한 공정한 정책 적용 등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영역에서는 대한민국이 경제력 이상의 외교적 신뢰, 브랜드 파워, 투명한 거버넌스를 갖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자성적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국제 계약에 있어 공기업의 투명성, 지도자의 외교 철학, ‘대한민국해’ 같은 상징적 명칭 사용의 필요성 등은 국격 제고와 국제 무대에서의 실질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과제들로 언급됩니다.

종합적으로, 이 질문들은 시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정의와 윤리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외교, 다문화·다정체성 사회에 부합하는 이주민 정책, 정보공개와 국격 제고를 통한 국제적 신뢰 확보 등 복합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집단적으로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제관계 및 외교 분야 질문의 키워드별 분포

외교 질문 빈도 비율

외교

'외교'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윤리적 일관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외교에서는 방위비 분담, 북미관계 활용, 트럼프 시대의 전략적 협상력 등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제안하며, 외교 정책이 정치 성향을 넘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조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해양 경계, 상호주의 원칙, 반중 정서에 대한 반성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 오염수, 핵폐기물 문제 등 외교적 갈등 현안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안전성 확보가 주요 이슈로 부각됩니다. 외국인 항목에서는 체류 외국인의 권리, 국적 취득 절차,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실효성 등 이주와 교류 정책에 대한 형평성과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역사왜곡 문제는 AI 시대에 날조 정보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외교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질문들은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면서도 윤리성과 실용성을 조화롭게 갖춘 외교 전략을 수립하길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 북미 수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해 제2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정구학)
-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시 미군 함 건조를 국내 건조시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협상할 수 있는가? (안상학)
- 국익 중심 외교가 필요할 때 입니다. (남준현)

중국

- 중국 서해 구조물이 해양경계 협상에서 수역 확보 근거로 쓰이는데, 우리도 구조물 설치로 대비할 수 없나요?(성채린)
- 극우와 일부 2030은 왜 중국을 적대시하는가? (김상업)
- 모든 정책에 각국 상호주의를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박향미)

일본

-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최재혁)
- 일본 핵폐기물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KIM HAE KYUNG)

외국인

- 한국에 온 지 13년이 되었는데 한국 국적도 없이 언제까지도 한국 국적을 공부로는 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규창)
- 몇십 년간 선진국으로 갔던 워홀... 이미 선진국 문턱에 있는 한국은 왜 워킹홀리데이하는 젊은 외국인들이 없나요? (박근용)

이주민 질문 빈도 비율

이주민

'이주민'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국적과 정체성, 권리 보장과 제도적 형평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국경을 넘어 살아가는 한국인의 삶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외동포 항목에서는 독립운동가 후손의 귀국 어려움, '외국에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귀국은 왜 어려울까요?' 귀환을 희망하는 동포들에 대한 지원 부족, 그리고 재외공관의 공무원에 의한 갑질 문제 등 장기 미해결 과제들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 마련이 촉구됩니다. 국적 항목에서는 이중국적 허용 여부와 병역의무 간의 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유연한 국적 정책 필요성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관련 질문에서는 장기 거주 해외 교민에 대한 복지 혜택, 특히 출산 장려 정책의 형평성과 범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러납니다.

전반적으로 이 질문들은 '이주민'을 타자가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부로 인정하고, 글로벌 정주 사회에 걸맞는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바람이 담겨있습니다.

해외동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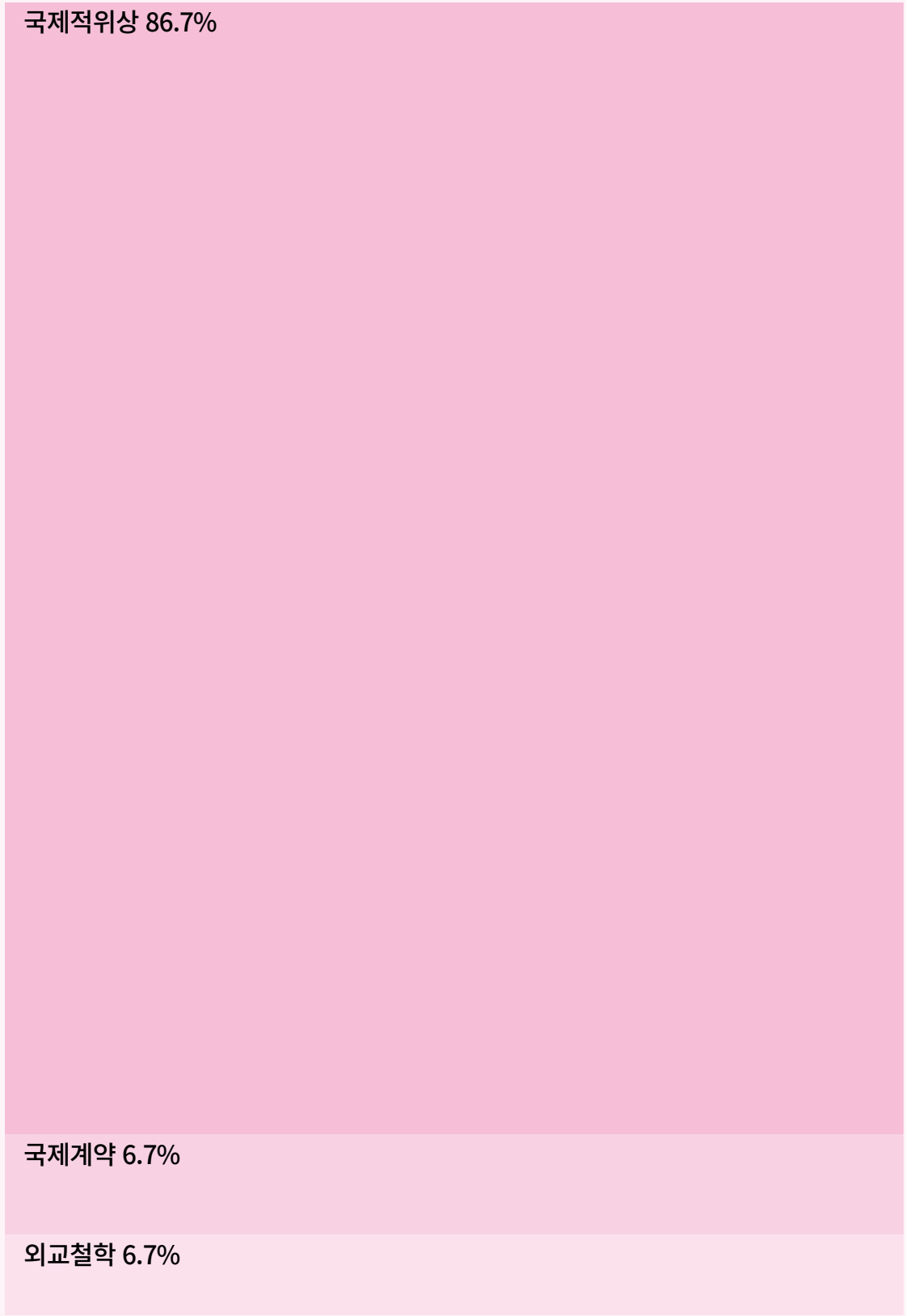
- 외국에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귀국은 왜 어려울까요? (홍창효)
- 해외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동포들을 위해 해외동포 포용정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성규)
-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및 재외국민이나 교민들에 대한 갑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경태)

국적

-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나요? (정선아)
-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여러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복무의 중요성이 이러한 이점들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을까요? (SR)
- 선천적 복수국적을 아십니까? (영손)

재외국민

- 장기 거주 재외국민 자녀의 출산 장려금 지급 정지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신승하)



국가 경쟁력 질문 빈도 비율

국가 경쟁력

'국가경쟁력'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략, 철학적 기반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적 위상 영역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파워나 금융 주권, 글로벌 존재감 등 비경제적 영향력 측면에서는 왜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성적 질문이 제기됩니다. '대한민국해' 명칭 사용 문제, 아시아 금융 주도권 확보 전략, 그리고 국가 브랜드의 국제적 격차 해소 방안 등은 국격 제고와 스마트파워 확장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과제로 이어집니다. 국제 계약 관련 질문에서는 해외 원전 수주 등 대형 국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공기업의 정보 공개와 책임성 있는 설명 부족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며, 이는 공공성과 투명성의 강화가 국제 경쟁력의 기초임을 시사합니다. 외교 철학 항목에서는 개별 정치 지도자의 외교 철학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이 확인되며, 이는 국가 외교가 단기 이익이나 대외 이벤트 중심이 아니라 장기적 철학과 비전 아래 일관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읽힙니다.

결국 이 질문들은 대한민국이 물질적 성장 그 이상으로, 책임감 있는 글로벌 리더십과 투명한 국가 운영, 명확한 철학을 갖춘 외교 전략을 통해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갖추기를 바라는 시민의 기대와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적 위상

- 왜 우리나라의 브랜드 파워가 낮다고 생각할까? (이정훈)
- 경제 10대 강국 주식 총합이 미국 한 기업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주환)
-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현규)
- 왜 대한민국 바다를 '대한민국해'로 공식 표기하지 않나요? (김영혼)
- 아시아 금융주권을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방법론은 없을까요? (이기식)

국제 계약

- 두바이 원전의 손익계산서와 체코 원전 수주의 계약 상황은 왜 알려져 있지 않나요? 민간기업 형태이지만 사실상 공기업인 한전이 주체인데... (곽대종)

외교 철학

- 이재명 대표님의 외교철학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김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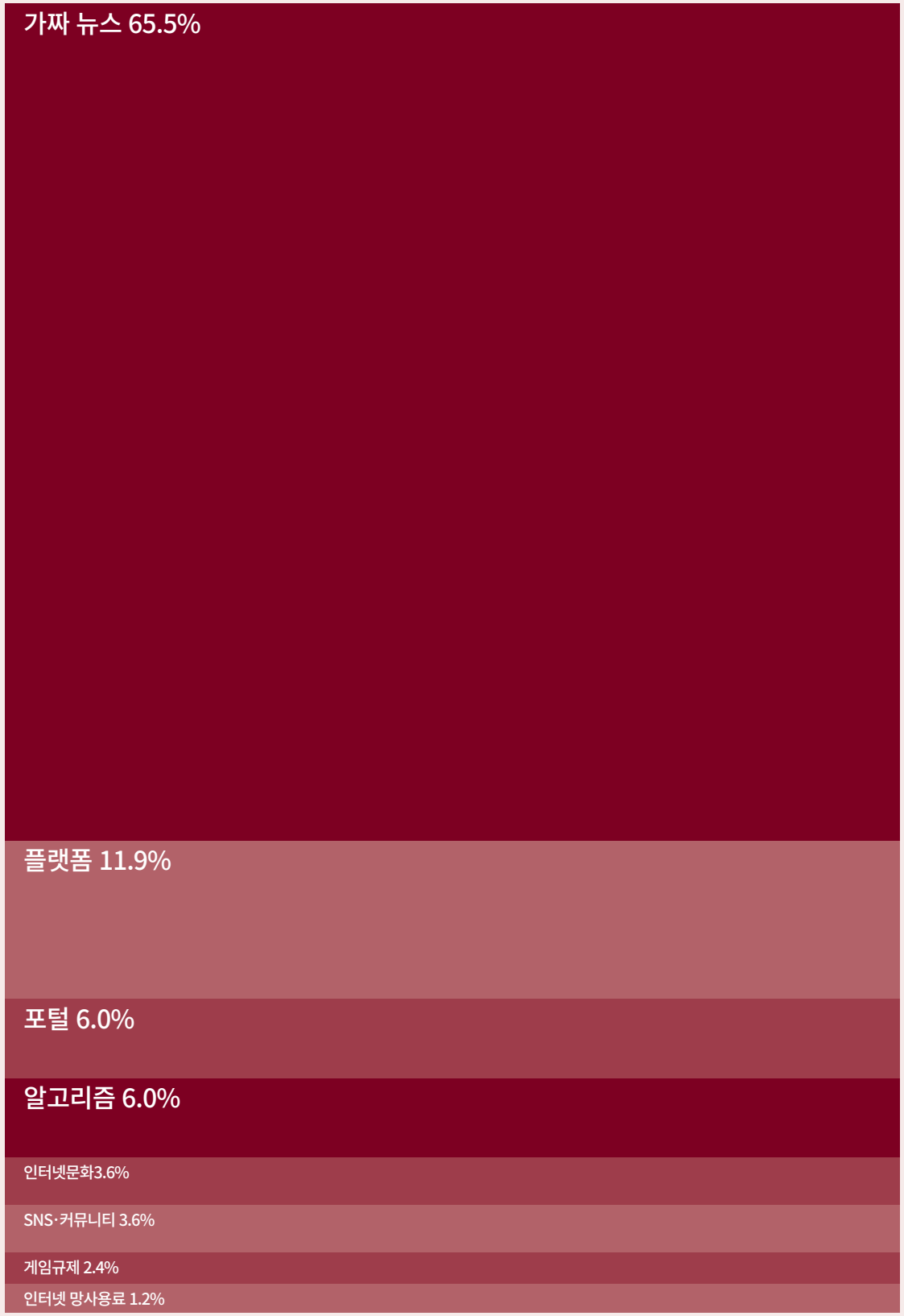
디지털 사회와 정보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오늘날, 시민들은 기술의 혁신 자체보다 그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공공성과 신뢰, 권리 보호를 중심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와 정보화’에 대한 질문들은 단편적인 불편의 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행정, 정보 접근, 개인정보, 가상자산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선과 가치 재정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질문들은 정보의 신뢰성과 알고리즘의 중립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공공 플랫폼의 부재, 온라인 혐오와 게임 규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시민들은 정보 생태계가 사회 갈등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구조로 작동하길 요구하며, 특히 플랫폼 권력에 대한 견제와 디지털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디지털 행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실질적인 행정 편의와 접근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인증, 단절된 행정정보, 비표준화된 문서 체계, 그리고 정권에 따른 IT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모두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중심 행정의 부재를 드러냅니디. 시민들은 기술 중심이 아닌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정보 공개의 투명성, 디지털 약자를 위한 접근권 보장, 과도한 인증 절차 등 디지털 환경의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문제의식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정보 민주화와 평등한 디지털 권리를 위한 사용자 중심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보이스피싱, 인증 시스템, 디지털 성범죄 등 기술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보여줍니다. 시민들은 단순한 보안 기술이 아닌, 사회적 신뢰 인프라, 피해자 중심 법제도, 기업과 정부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닌 공공적 보호의 대상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질문은 금융 환경의 변화 속도에 비해 제도와 인프라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결제 수단 인정, 금융정보 시스템의 범용화, 디지털 화폐의 실질화 요구는 미래 금융 질서에 걸맞은 개방적이고 안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시민적 문제의식을 반영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디지털 사회는 단순히 기술이 발전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이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를 보장하며, 공동체를 더욱 민주적이고 포용적으로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정보와 기술의 민주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디지털 사회와 정보화’에 대한 시민의 질문들은 바로 그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디지털 사회와 정보화 질문 빈도 비율



디지털 플랫폼 질문 빈도 비율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정보 생태계 전반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며 디지털 공간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가짜 뉴스와 알고리즘 관련 질문에서는 악의적 허위정보의 유포와 추천 시스템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편향을 조장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표출됩니다. 시민들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상시적 대응 조직을 갖출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공적 정보 질서 재정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항목에서는 배달·숙박앱 같은 대형 플랫폼의 독점성과 수익구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배달앱, 숙박앱 등의 배불리기는 이제 그만 해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육아 돌봄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공 플랫폼의 부재를 지적하며 플랫폼 기술이 사익보다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포털과 인터넷 망 사용료에 대한 질문들은 글로벌 기술 서비스 이용 제한(예: 구글 지도)과 국내 망 이용료 체계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며 시민들은 접근권과 정보 인프라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들은 디지털 플랫폼이 단순한 기술 기반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과 책임성을 지닌 구조로 운영되어야 함을 요구하며, 정보의 질, 알고리즘의 편향성, 플랫폼 기업의 권력 견제, 디지털 권리 보호 등 다면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사회 계약의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 사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가짜 뉴스를 생성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요? (우상규)
-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가짜 뉴스에 대처하는 상시적 정부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기호)
-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플랫폼도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황건구)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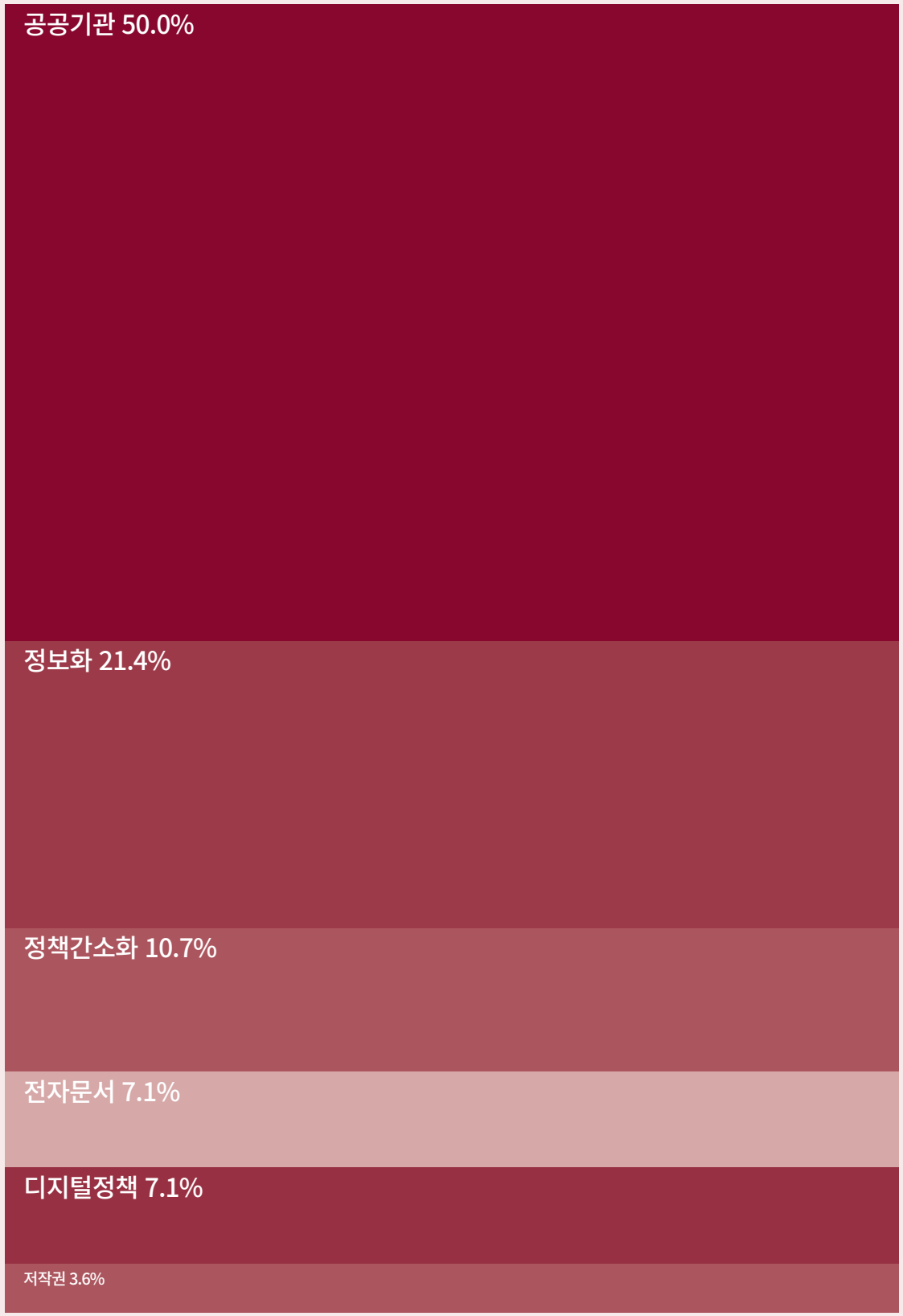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유동적인 돌봄 플랫폼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은표)
-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은 왜 개발하지 않거나 활성화 되지 않은지요? (최정환)
- 배달앱, 숙박앱 등의 배불리기는 이제 그만 해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선구)

포털

- 왜 국내에서 제대로된 구글지도를 사용하지 못하는가? (서인찬)
- 포털도 책임 져야죠? (최선미)

알고리즘

- 유튜브의 편향적 알고리즘이 정치영역에 적용되는 것을 지금같이 두어도 되는가? (신지산)
- 유튜브에서 부정선거론자들에게 계속 망상을 강화하는 동영상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 없나요? (김윤우)



디지털 행정 질문 빈도 비율

디지털 행정

'디지털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국민 체감도가 낮은 행정 시스템 비효율적인 절차 그리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더 간편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디지털 행정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항목에서는 복잡한 인증 시스템, 분산된 행정정보 접근성,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불가 등 현실적인 불편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지며,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일관성과 편의성 향상이 핵심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영역에서는 국민이 직접 앱을 만들어 공공 데이터와 연동하거나, 행정 정보를 온톨로지 기반으로 체계화하자는 참여형·지능형 정보화 제안이 등장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부-국민 간 상호작용 강화에 대한 기대가 드러납니다. 정책 간소화 관련 질문에서는 공공기관별로 제각각인 계약 서류나 어려운 행정용어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 서식의 표준화와 언어의 쉬운 전환이 필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항목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종이 서류 없이 등기부 등본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달라는 요청이 나타나며, 디지털 문서의 법적 효력과 신뢰 기반 확보가 중요하게 논의됩니다. 디지털 정책에 관한 질문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과, 정권 교체에 따라 IT 정책이 중단되는 문제에 대한 민주적 방지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시각입니다.

요약하면 이 질문들은 디지털 행정이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을 보여주며, 접근성·표준화·참여·지속가능성·법제도 정비라는 측면에서의 종합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성찰과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 왜 우리만 복잡한 인증 제도와 시스템을 갖고 있을까요? (조정행)
- 국가와 지자체 지원정책을 좀 더 많이 알릴 방법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남궁정선)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왜 안 되는가요? (이진숙)

정보화

- 국민이 직접 만드는 앱, 국가 데이터와 연결되면 어떨까요? (김진희)
- 대한민국 행정의 온톨로지화가 가능할까? (전자정부 업데이트) (이준섭)

정책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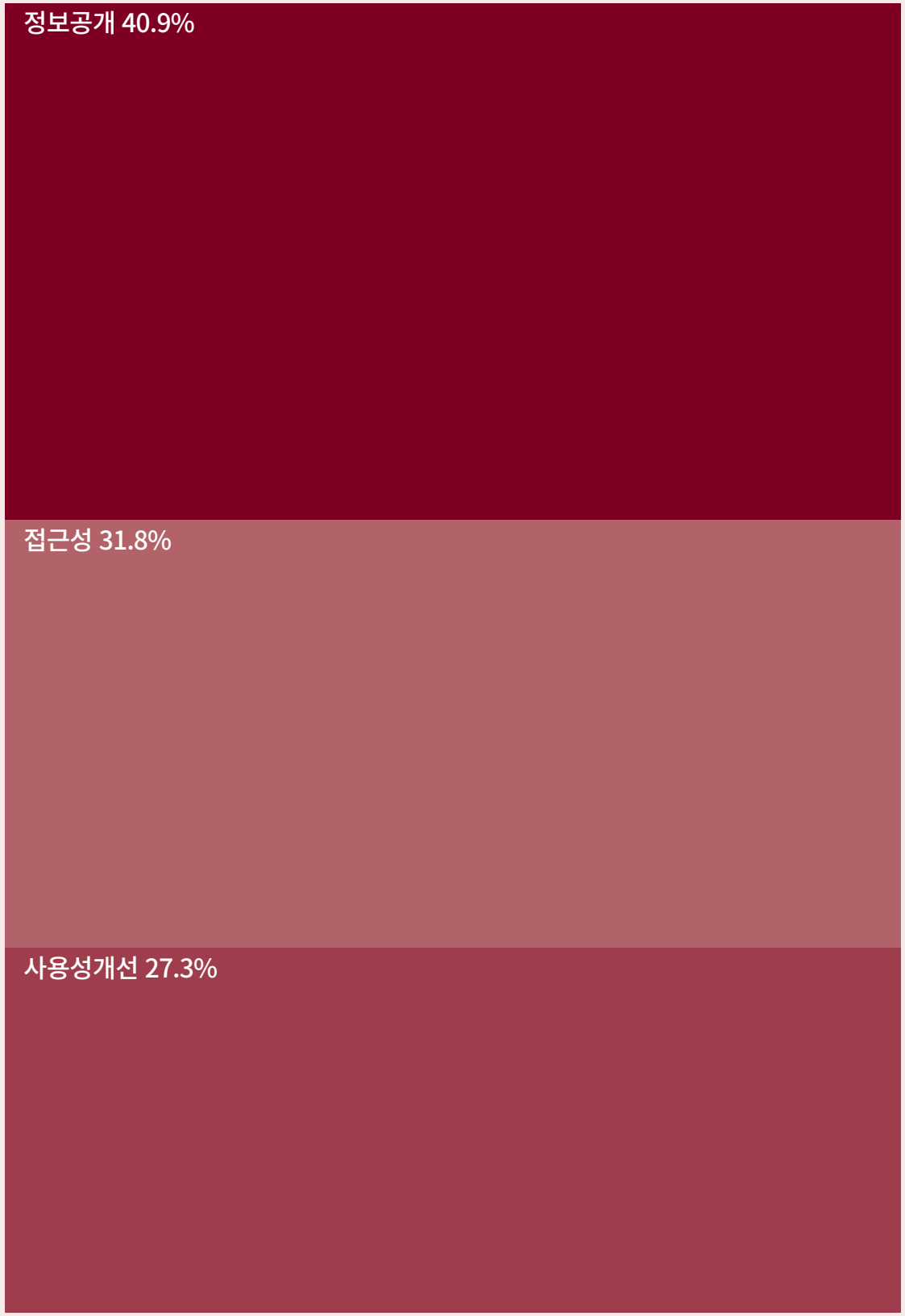
- 공공기관의 소액 계약에 제출되는 서류가 왜 통일되지 않나요? (김상국)
- 공공문서 서식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쉽고 명확하게 바꿀 수 없을까요? (이인식)

전자문서

- 등기부 등본 만으로 안전하게 부동산 매매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최의찬)

디지털 정책

- 정부의 디지털전환, 왜 국민은 여전히 불편한가요? (윤성원)



정보 접근성 질문 빈도 비율

정보 접근성

'정보 접근성'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정보가 누구나 쉽게, 공정하게,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진정한 민주화는 정보의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개 되어야 하는 정보와 공개 되지 않아야 하는 정보를 구별하는 기준이 어떤 것일까?" 정보공개 투명성, 디지털 접근성 확대, 사용성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공개 항목에서는 정부 기관의 정보가 여전히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알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정보의 민주화'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어떤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담겨 있습니다. 접근성 영역에서는 공공 언어의 난해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미흡, 디지털 기기 이용 연령 제한 필요성 등의 이슈가 등장합니다. 이는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언어·인지·기술적 장벽을 낮추는 정보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며,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사회적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보 접근 평등권 보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용성 개선 항목에서는 한국 사회의 과도한 본인 인증 절차나 아이폰의 교통 태깅 미지원 문제처럼 기술이 실제 생활에서 국민 편의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이 드러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실질적 사용성의 개선과 일관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연결됩니다.

총체적으로 이 질문들은 '정보 접근성'이 단지 인터넷에 연결되는 문제를 넘어 정보에 닿는 과정 전체의 민주화와 평등화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설계와 운영 철학의 필요성을 일깨우며 포괄적이고 신뢰 가능한 정보 사회를 향한 사회적 성찰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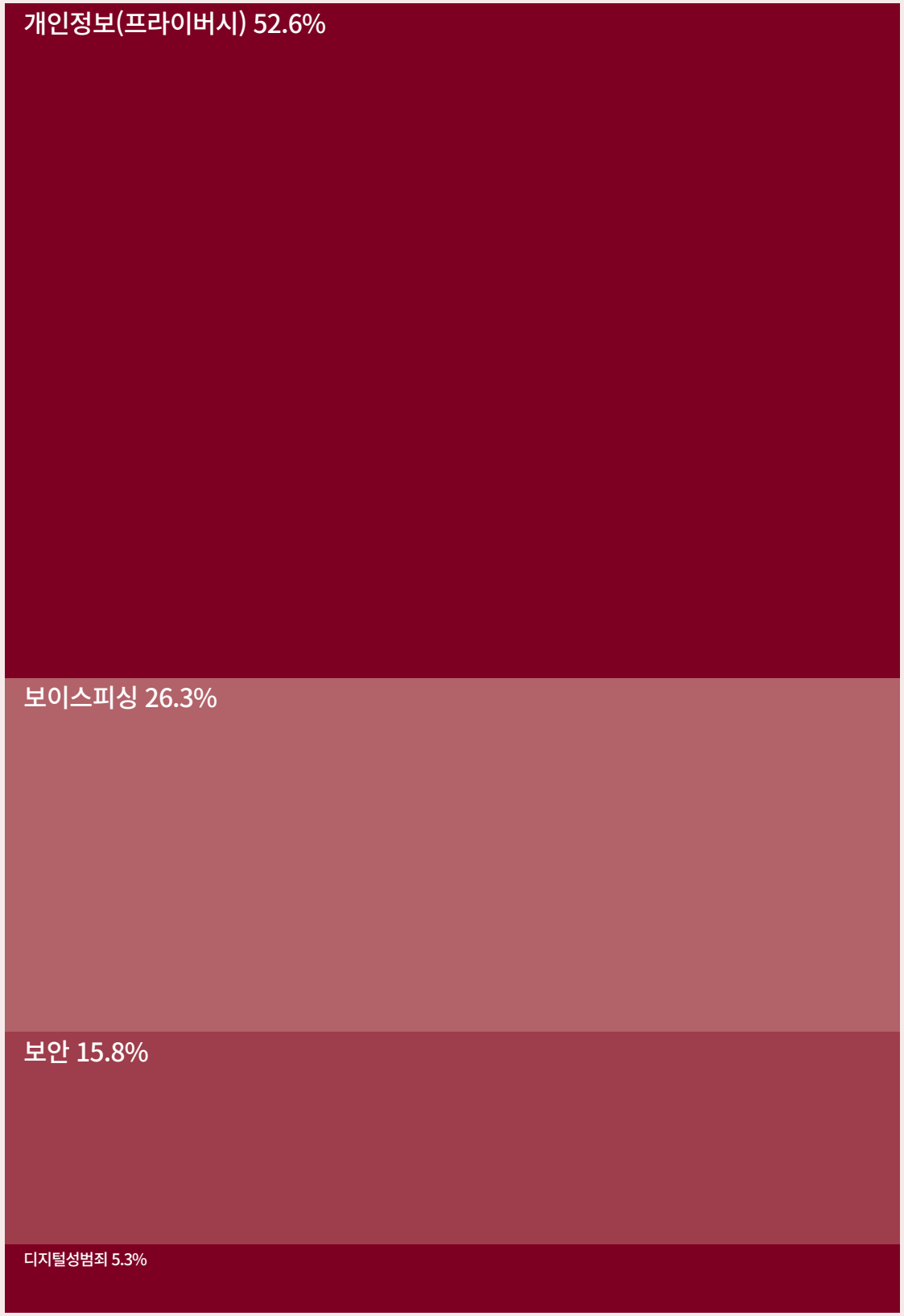
- 정부 기관이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은? (유명규)
- 국민의 알 권리는 왜 항상 뒷전인가? (이경미)
- 진정한 민주화는 정보의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개 되어야 하는 정보와, 공개 되지 않아야 하는 정보를 구별하는 기준이 어떤 것일까? (한석규)

접근성

- 왜 그들은 어려운 용어를 써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까요? (장재섭)
- 장애인의 ICT 기술 및 인터넷 접근성 강화, 이런 방향은 어떠신가요? (이수영)
- 스마트폰 구매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재욱)

사용성 개선

- 한국 사회는 본인 인증이 꼭 필요한 것인가? (김원태)
- 아이폰은 지하철에서 승차용으로 태깅이 왜 안되나요? (염정문)



개인정보 보호 질문 빈도 비율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데이터가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상황에서, 단순한 법적 보호를 넘어 제도, 기술, 인식 전환 전반에 걸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공감과 요구가 나타납니다.

우선 개인정보(프라이버시) 항목에서는 기업이나 기관의 허술한 보안으로 인한 정보 유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 책임과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며 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 보호의 최소 기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가 지적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사실상 공공재처럼 유통되는 현실에서 보안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보이스피싱 항목에서는 지능화된 사기 수법에 대한 불안 속에서 통화 중 실시간 신고 기능 도입, 정부 차원의 감지·차단 기술 개발 등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와 연계된 범죄는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예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보안 항목에서는 공인인증서 등 복잡하고 불편한 인증 체계가 여전히 남아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함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보안 시스템 개편 요구가 등장합니다. 이는 보안을 이유로 사용자 책임만 강조하는 기존 체계를 넘어서, 시민 중심의 디지털 신뢰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성범죄 항목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와 비교해 처벌 수준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강간 피해와 동일한 트라우마를 가지는데, 처벌은 왜 이렇게 미약한가요?" 이는 단순한 형사처벌 강화를 넘어서 피해자 보호 중심의 디지털 사법 체계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이 질문들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기술적 사안이 아닌, 사회적 신뢰와 안전을 위한 기본권의 문제로 바라보며, 국가와 기업의 책임 강화, 범죄 예방 시스템 고도화, 시민 중심의 보안 환경 조성, 그리고 디지털 인권 감수성의 제도화라는 복합적 과제를 함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 취약한 보안으로 개인정보가 해킹되었을 때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요? (김용구)
-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보안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 할 수 있을까? (정병진)

보이스피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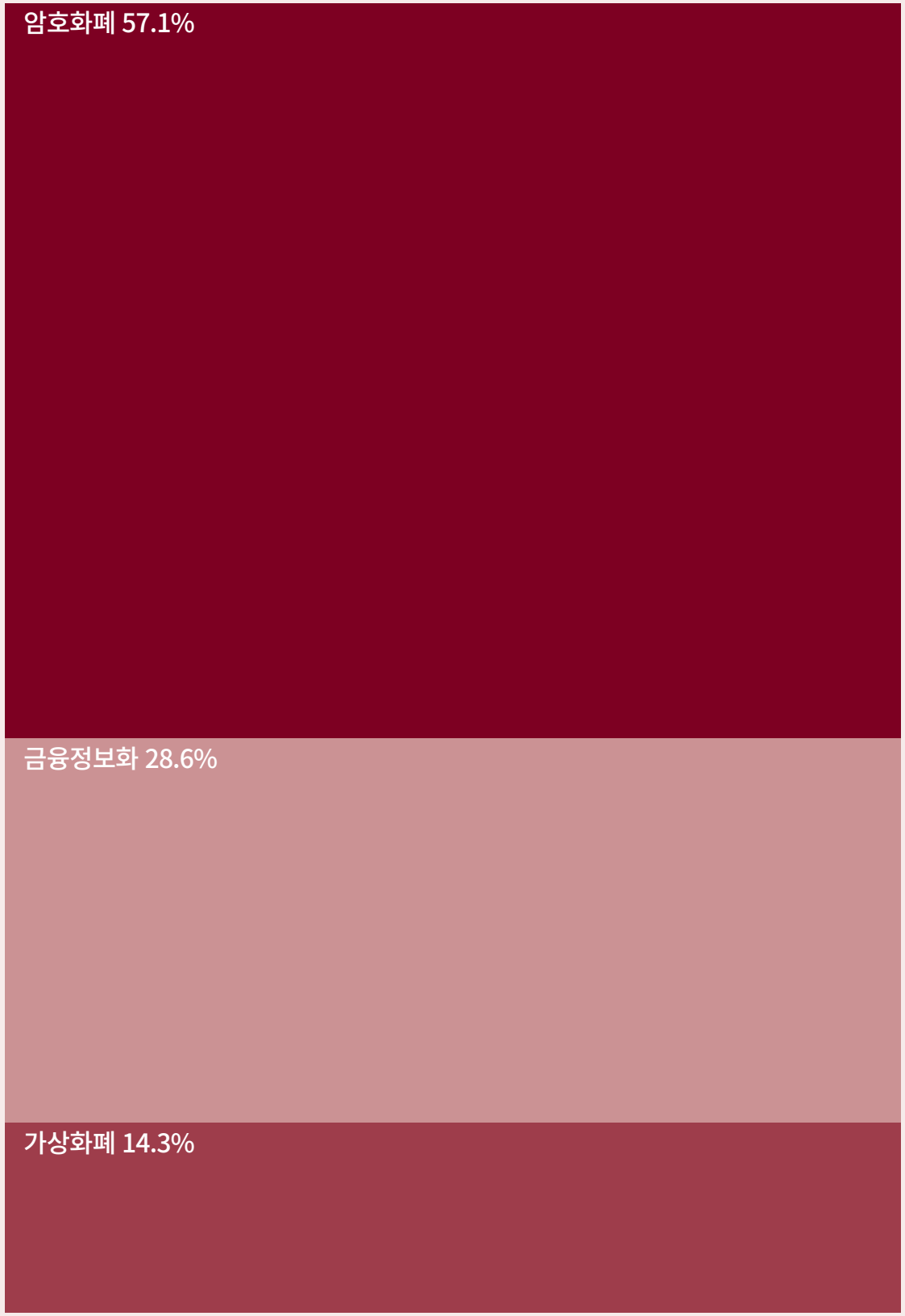
- 보이스피싱 전화란 걸 감지하였을 때 통화 중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추적이 쉽지 않을까요? (김종희)

보안

- 왜 인터넷 사용 보안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합니까? (정유경)
- 진정으로 공인인증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조성용)

디지털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강간 피해와 동일한 트라우마를 가지는데, 처벌은 왜 이렇게 미약한가요? (김복희)



가상자산 질문 빈도 비율

가상자산

'가상자산'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암호화폐의 제도적 수용, 금융 시스템의 기술적 진화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디지털 금융 환경의 변화 속도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또 미래 금융 생태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반영합니다.

암호화폐 항목에서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결제 수단 인정 및 유통 구조 허용에 대한 요구가 제기됩니다. 특히 하드웨어 지갑 등 암호화폐 관련 상품의 판매에서 은행권이 결제 대행(PG)을 거부하는 현실은 금융권의 폐쇄성과 규제 미비를 지적하는 사례로 등장하며, 이는 곧 암호화폐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제도적 장벽 완화 필요성으로 연결됩니다. 금융 정보화 영역에서는 여전히 운영체제 종속적으로 작동하는 국내 금융·공공 웹사이트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며 이는 기술 환경 변화에 뒤처진 정책과 시스템의 경직성을 반영합니다. 시민들은 더 개방적이고 범용적인 디지털 금융 환경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질문들은 한국의 가상자산 정책이 보수적 규제 프레임에 갇혀 글로벌 금융 혁신 흐름에 뒤처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이 보다 실용적이고 안전하게 제도권 내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술, 법제, 금융 인프라 전반의 정비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 왜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개인지갑 하드웨어의 판매와 관련하여, 은행권이 PG(결제대행)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기용)
- 암호화 화폐를 연동한 결제시스템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이춘길)
- 가상자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김영진)

금융 정보화

- 특정 운영체제에서만 작동하는 금융, 공공 사이트들 언제쯤 바뀔까요? (신대철)

가상화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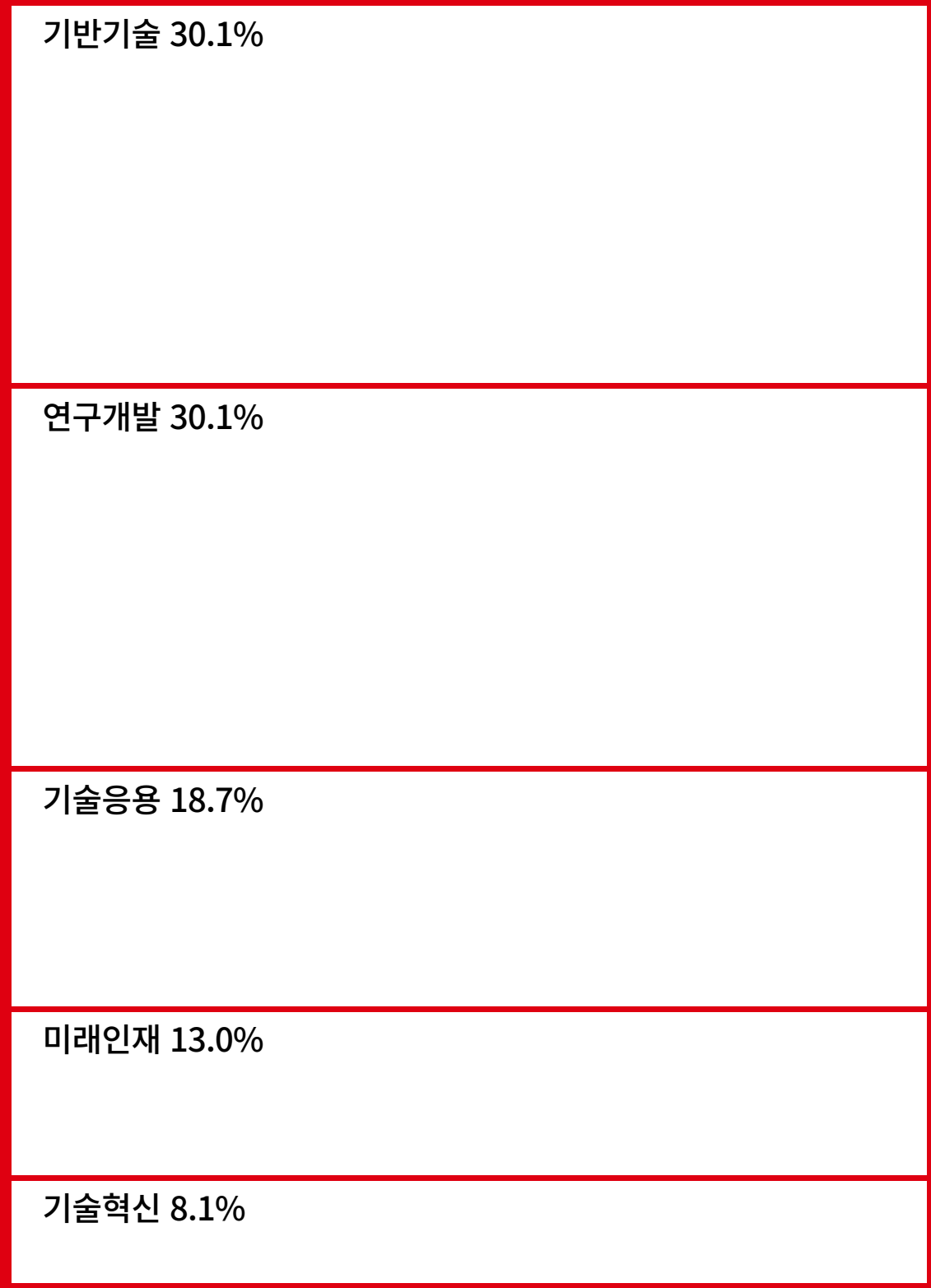
- 왜 우리나라는 크립토로 화폐 전환 못하는가? (주성호)

과학기술과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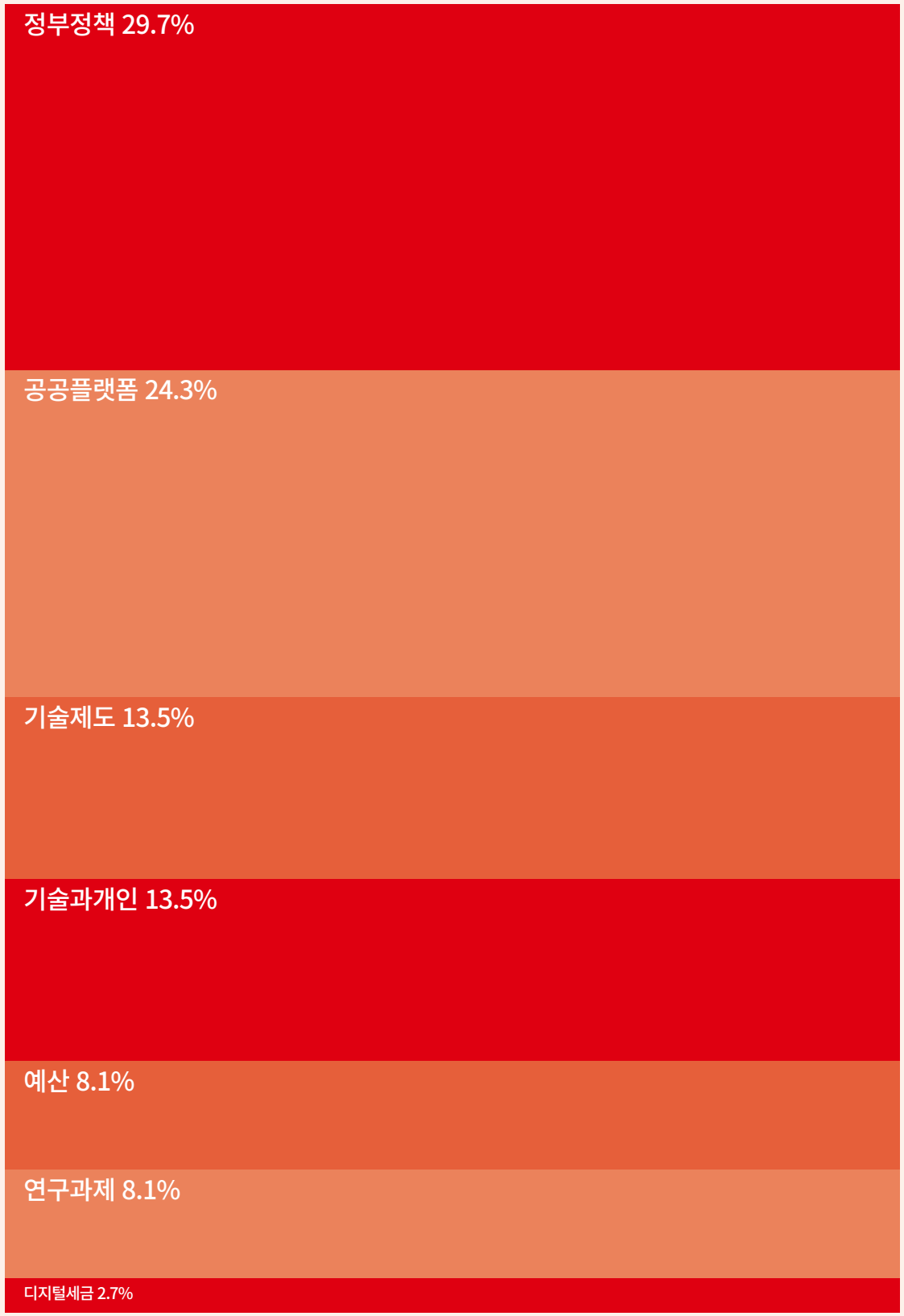
‘과학기술과 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기술이 단지 발전과 성장의 도구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공공성, 민주성, 포용성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집단적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연구개발 생태계의 투명성부터 인재 유출, 기술 패권 전략, 일상 속 디지털 불평등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의 방향성과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우려를 함께 드러냅니다.

먼저 연구개발 항목에서는 AI·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공 의사결정 구조, 로봇세 같은 신제도 도입 필요성, 공공 데이터 개방의 부재로 인한 AI 경쟁력 저하, 연구과제 선정의 폐쇄성 등 정책 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요구가 중심을 이룹니다. 기술이 삶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개인 권리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제기됩니다. 기반기술 항목에서는 대한민국이 AI, 반도체, 기초과학 등에서 자립적이고 윤리적인 기술 패권국이 되기 위해 단기성과 중심을 넘어선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기초과학 소외 문제, AI 활용의 공공성 확보, 반도체 산업의 전략화는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방향 설정과 직결된 질문들입니다. 미래 인재 영역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과학자, 박사급 연구자의 소외,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 등 인재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과학기술 생태계의 핵심 자산이자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납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존중, 연구 환경 개선, 진로 다양성 확보가 반드시 병행돼야 함이 강조됩니다. 기술혁신 항목에서는 웹접근성과 디지털 격차 해소,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디지털 투표 실험, AI의 학문 간 융합 가능성 등 기술이 사회 전반의 형평성과 창의성, 민주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이 논의됩니다. 또한 Web3 기반 금융거래 확장,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형평성과 정치적 논쟁 등은 기술 도입이 사회적 합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적 감수성을 반영합니다.

요컨대, 이 모든 질문은 대한민국이 기술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기술은 어떻게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중심에 두고, 제도, 인재, 윤리, 사회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시민의 절박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은 혁신이자 권력이며, 그만큼 공공성과 신뢰, 인재 중심의 생태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 이 질문들이 전하는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과학기술과 혁신 질문 빈도 비율



연구 개발 질문 빈도 비율

연구 개발

'연구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기술 혁신이 불러올 미래에 대해 국가와 개인이 어떤 준비와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부정책 영역에서는 로봇세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과세 제도 도입 필요성과 함께, AI를 활용한 정책 합의 시스템 구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 플랫폼 관련 질문에서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신뢰성 저하와 공공 데이터 개방 부족이 한국의 AI 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으며, 디지털 시대의 인프라가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갖춰야 함을 강조합니다. 기술제도 항목에서는 기술 변화에 맞춰 제도와 시험, 수리 체계 등을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실용적 제안들이 제기되며, 기술과 개인 영역에서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 정체성 위협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서는 미래 기술 투자 방향의 합리성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는 특정 전문가 집단의 폐쇄적 구조를 넘어, 누구나 참여하고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모든 질문은 기술 중심의 시대 속에서 시민이 배제되지 않고, 공정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집단적 문제의식과 제도 혁신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정책

- AI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적으로 모두가 신뢰하고 투명한 아젠다 설정 및 정책합의 구조화는 과연 불가능한가요? (김범)
- 로봇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유현석)

공공 플랫폼

- 공공 데이터 개방이 부족할 경우, 한국의 AI 경쟁력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남궁호)
- 전자 정부 시스템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 버린 건가요? (송명훈)

기술제도

- 고장나서 버려지는 물건들을 쉽게 고칠 수 있는 A/S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창현)
- 아직도 손으로 도면을 그리는 기술자격증시험, 시대에 맞는 시험으로 바꾸면? (김욱진)

기술과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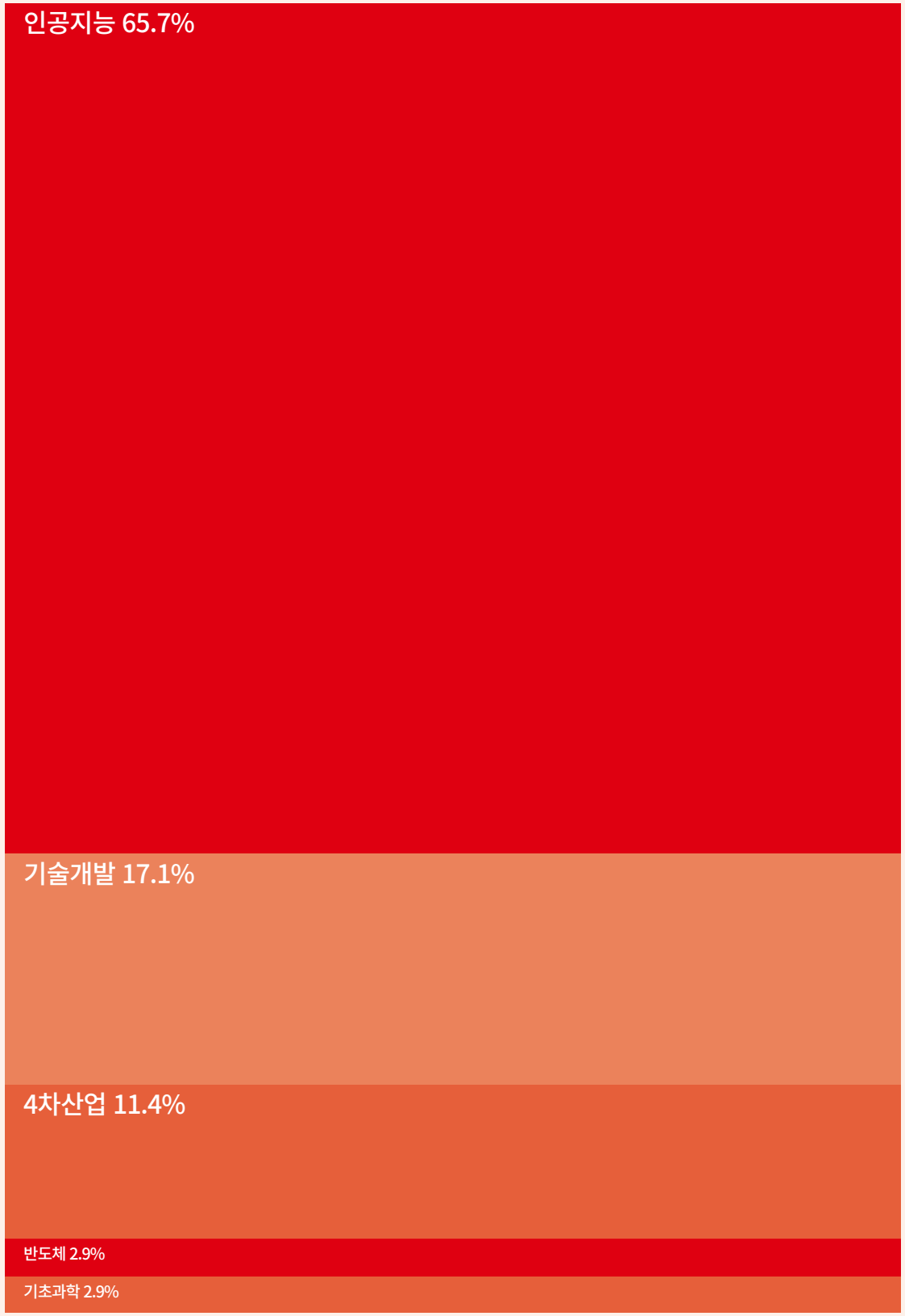
- 키오스크 어떻게 안될까? (이민석)
- CCTV, 로봇, AI를 통한 사생활 침해를 어떻게 막고, 늦추고,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최가라뫼)
- 내가 죽은 후 AI로 생성될 '나'를 제한할 수 있을까? (오희경)

예산

- 대왕고래 등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고, 미래 기술 분야에 제대로 투자하려면? (김상준)
- 연구 개발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되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어 일정 수준의 배당을 하면 어떨까요? (노우철)

연구과제

- 미래 기술, 과학의 미래를 좌우하는 과제가 왜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요? (우성우)
- 연구 과제화를 위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이 있으면?(정성묵)



기반 기술 질문 빈도 비율

기반 기술

'기반 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대한민국이 기술 주권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근본적 전환과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AI와 빅데이터 같은 첨단 기술이 인간 중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설계와, 공공 영역에의 투자 환수 구조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를 단순한 효율성과 자동화의 수단이 아닌, 공공성과 윤리를 중심에 둔 기술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기술개발 항목에서는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 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요청이 등장하며, 기존의 관료적·공급자 중심 구조에서 사용자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혁신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관련 질문에서는 AI, IoT,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외국 기술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고립되지 않는 방식의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전략적 균형이 강조됩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자국 산업의 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강자와 비교하며, 우리나라가 독립적인 기술 자립과 산업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투자 방향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장기 비전과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실용성과 산업 응용에 밀려 기초과학이 소외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납니다.

전반적으로 이 질문들은 단기 성과 중심의 기술 투자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성과 공공성, 국제 경쟁력과 자립성, 응용과 기초의 균형을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한 기술 국가'를 향한 전략적 기반 구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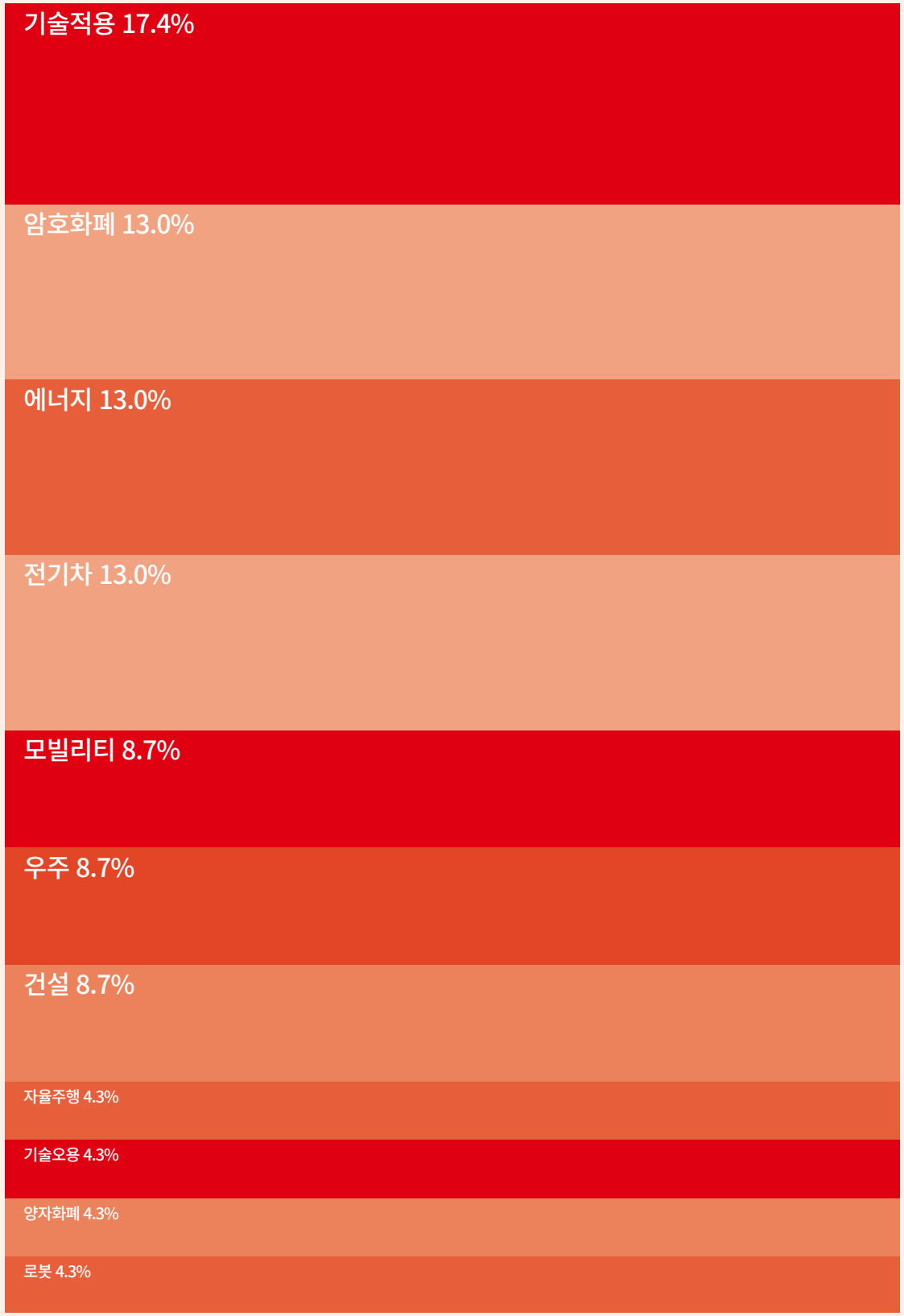
- AI,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이 인간 중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조규복)
-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요? (안재홍)
- 어떻게 AI 투자의 공공 영역으로의 환수를 설계해야 할까요? (박승원)

기술개발

- 국가 연구 개발 선진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신효순)
- 국가 기관이나 대학의 기초 연구가 국민 개개인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합니다. (김현동)

4차산업

- 한국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현재 기존 질서의 4차 산업 혁명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 패권국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지훈)



기술 응용 질문 빈도 비율

기술 응용

'기술 응용' 분야의 질문들은 첨단 기술이 실제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제도적·윤리적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기술이 실생활에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냅니다. 키보드와 같은 일상적 도구에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 인프라, 스마트 건설, 에너지 자립마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 활용의 공백과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전환 기술의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과 규제 개선 요구가 강하게 제기됩니다. 동시에 암호화폐와 양자화폐처럼 새로운 금융 기술의 성장 가능성과 국가 차원의 정책 부재에 대한 불만, 기술 발전에 비해 고도화되지 않는 로봇 산업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납니다. 일부 질문은 기술의 오용, 특히 AI나 드론의 독재적 사용 가능성과 같은 윤리적 우려를 포함하여, 기술의 책임 있는 관리와 미래 설계를 함께 고민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은 '기술'이 단순한 혁신의 수단을 넘어 인간 중심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길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 투자, 제도 설계가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용

- 한글 사용(쓰기)에 적합한 키보드는 왜 만들지 않을까요? (오승아)

암호화폐

- 미국은 암호화폐에 올인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것을 가로막나요? (오순이)

에너지

- 재생열에너지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승재)
- 에너지 자립 마을은 정말 꿈일까요? (박정영)
- 민간 사업자 vs 자동차 제조사, 전기차 충전 인프라 책임은 누구에게? (윤병문)

전기차

- 민간 사업자 vs 자동차 제조사, 전기차 충전 인프라 책임은 누구에게? (윤병문)

모빌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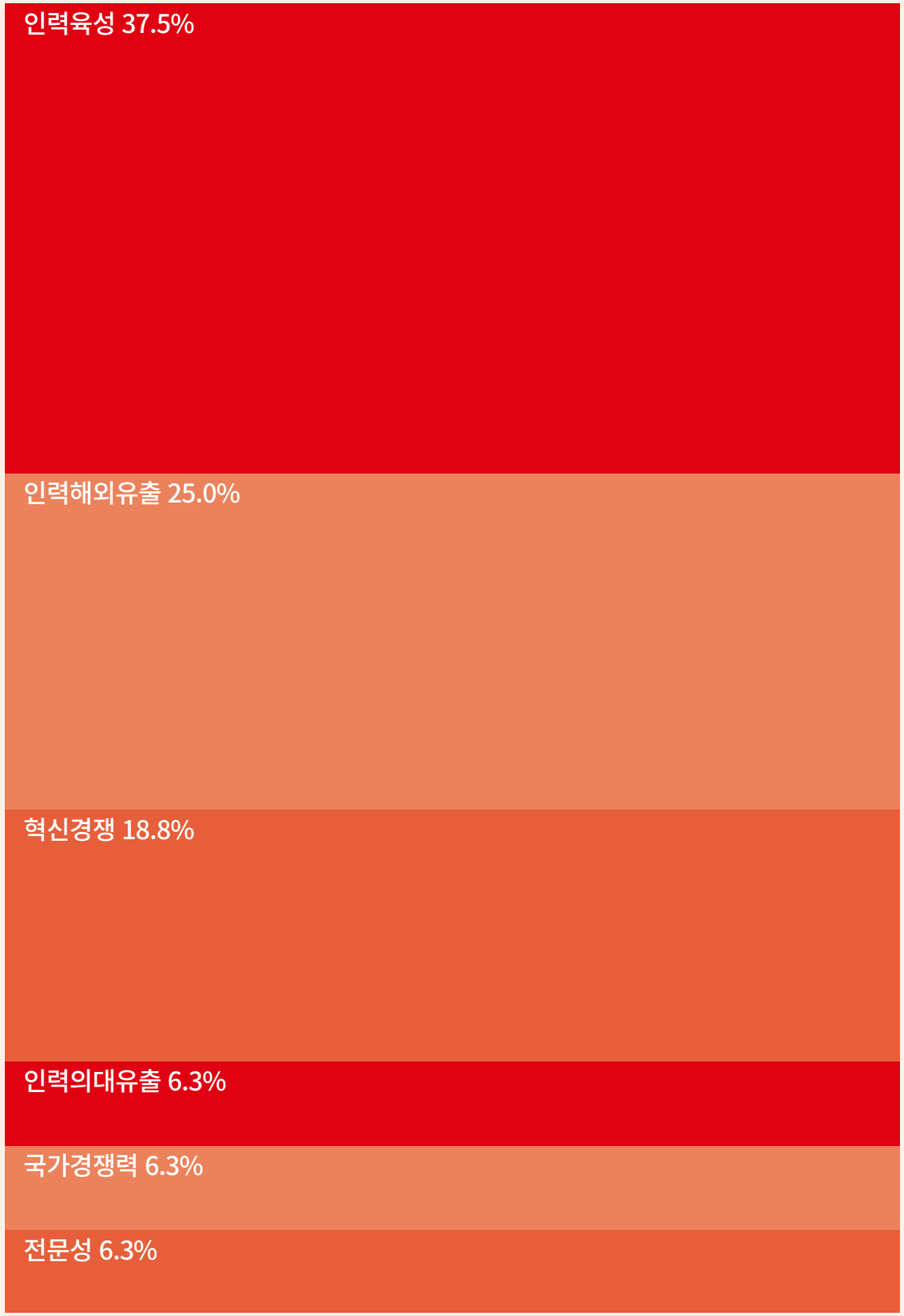
- 왜 차값은 기술이 발전해도 계속 비싼가요? (김영호)

우주

- 대한민국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유현석)

건설

- 우리나라는 왜 건설관련 업종에는 IT접목을, 스마트화를 하지않을까요? (하형경)



미래인재 질문 빈도 비율

미래인재

'미래 인재'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집단적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육성 항목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과학자나 박사급 연구자처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공계 및 기술 인재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인력해외유출 영역에서는 국내 여건의 한계로 인해 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들을 붙잡고 되돌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넘어, 자율성과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드러납니다. 혁신경쟁 항목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주도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묻고 있습니다. 수학, 이공계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인재들이 대거 의대로 진학하는 현실을 우려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매력도와 안정성 확보를 통해 진로 다양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집니다. 국가경쟁력 영역에서는 한국이 진정한 IT 강국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성적 질문과 함께,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강조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 항목에서는 AI 시대에 '어중간한' 전문성이 설 자리를 잃는 현실을 반영하며, 개인이 어떻게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질문들은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에 한국이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재'를 단순한 인력 자원이 아니라 미래 전략의 중심으로 놓고, 교육·진로·연구·사회적 인정 전반에 걸친 혁신과 균형이 필요하다는 시민적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인력육성

- 경력단절 여성 과학자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합니다. (이예림)
- 말로만 하는 기술인 육성, 우리나라는 언제쯤 엔지니어들을 존중해 줄까요? (최진혁)

인력해외유출

- 왜 한국의 우수 인력들은 죄다 해외로 빠져나갈까요? (jheartu7036)
- 유출되는 인적자원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thkim75)

혁신경쟁

-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는 인공지능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DOMIN LEE)

인력의대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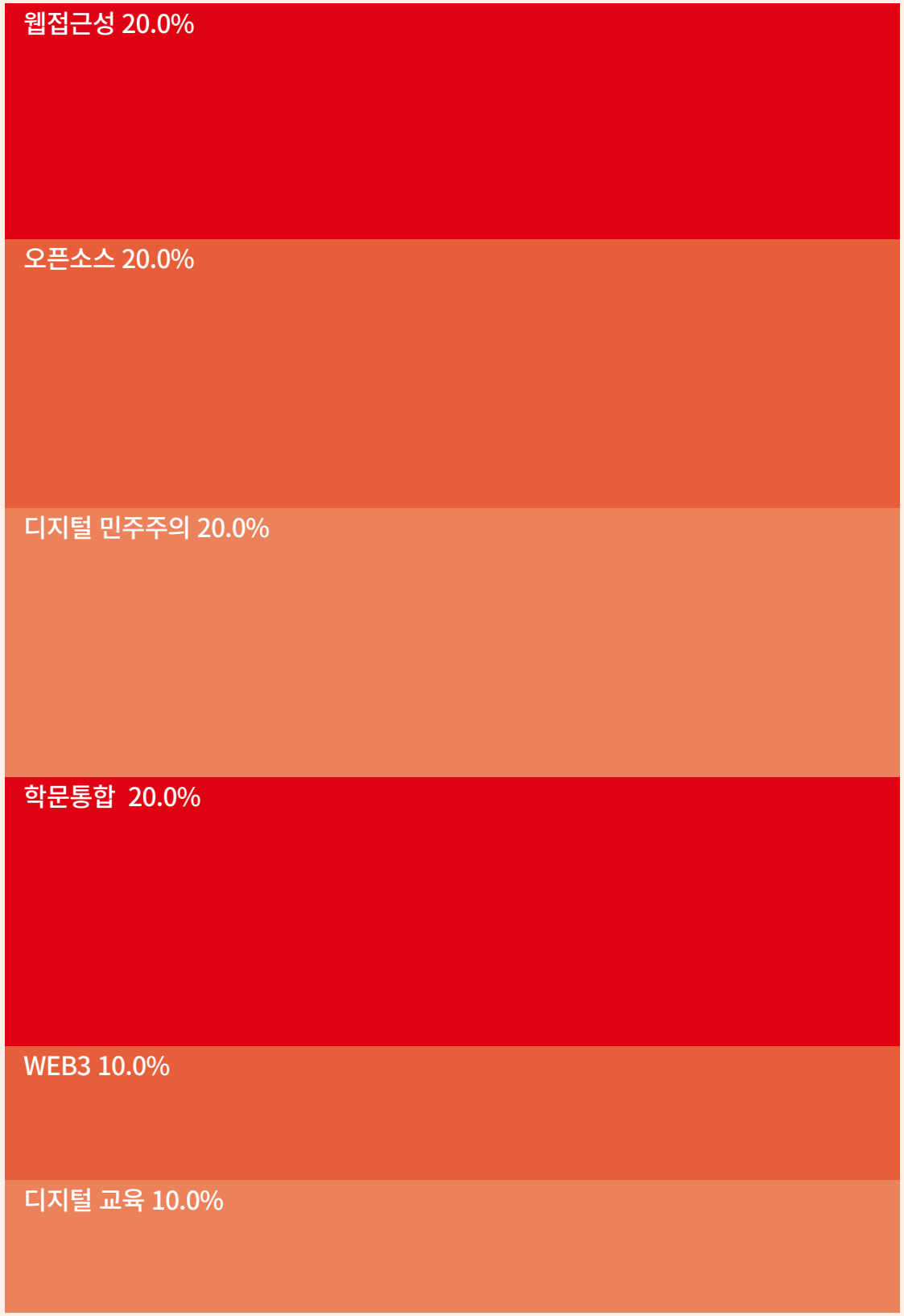
- AI, 반도체, 양자컴퓨터, 로봇 등 미래산업은 수학이 핵심인데 수학수재들이 모두 의대로 가버리면 대한민국은 후진국으로 떨어진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승철)

국가경쟁력

- 대한민국은 진정 IT 강국인가? (이훈상)

전문성

- 인공지능, 애매하고 어중간한 전문성으로는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최가라뫼)



기술혁신 질문 빈도 비율

기술혁신

'기술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디지털 시대의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과 함께, 기술을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웹접근성 항목에서는 기술 혁신이 접근성 개선과 정보 격차 해소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됩니다. 모두를 위한 포괄적 디지털 서비스 설계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드러납니다. 오픈소스 영역에서는 오픈소스 생태계의 부진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디지털 민주주의 항목에서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민 참여와 집단 지성 기반의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으며, 디지털 투표 등 새로운 정치적 실험의 가능성과 실행 기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문통합 영역에서는 AI와 빅데이터 같은 기술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거나 비정량적인 학문 분야, 특히 예체능이나 인문사회 분야와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Web3 관련 질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기술이 개인 간 금융거래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제도적 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적 실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교육 항목에서는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질문들은 기술혁신이 단지 신기술의 도입을 넘어, 사회 전반의 민주성, 포용성, 형평성, 통합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성찰과 제안입니다.

웹접근성

- 모두의 질문Q 플랫폼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들은 어디에, 어떻게 질문을 하나요? (박예림)
- 공단, 국가기관 등에 스마트폰 앱은 따로 따로 만들어 놨을까요? (김정국)

오픈소스

- 한국의 오픈소스 생태계는 왜 발전하지 못할까요? (이은식)

디지털 민주주의

- 직접 민주주의에 필요한 잦은 투표, 핸드폰으로 할 수 없나요? (이상무)
- 기술의 발전으로 직접 민주주의 집단지성 체제가 가능할까요? (최주천)

학문통합

- 상대적으로 대중에 폐쇄된 학문들에 AI와 빅데이터와 빅데이터간의 데이터 통합이 있으면 안될까요? (도완영)
- AI가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체능 분야들은 어떻게 대응 하나? (신은우)

WEB3

- Web3를 통한 금융거래로 개인 간 결제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김종갑)

디지털 교육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민주당에서 막을 거죠? (윤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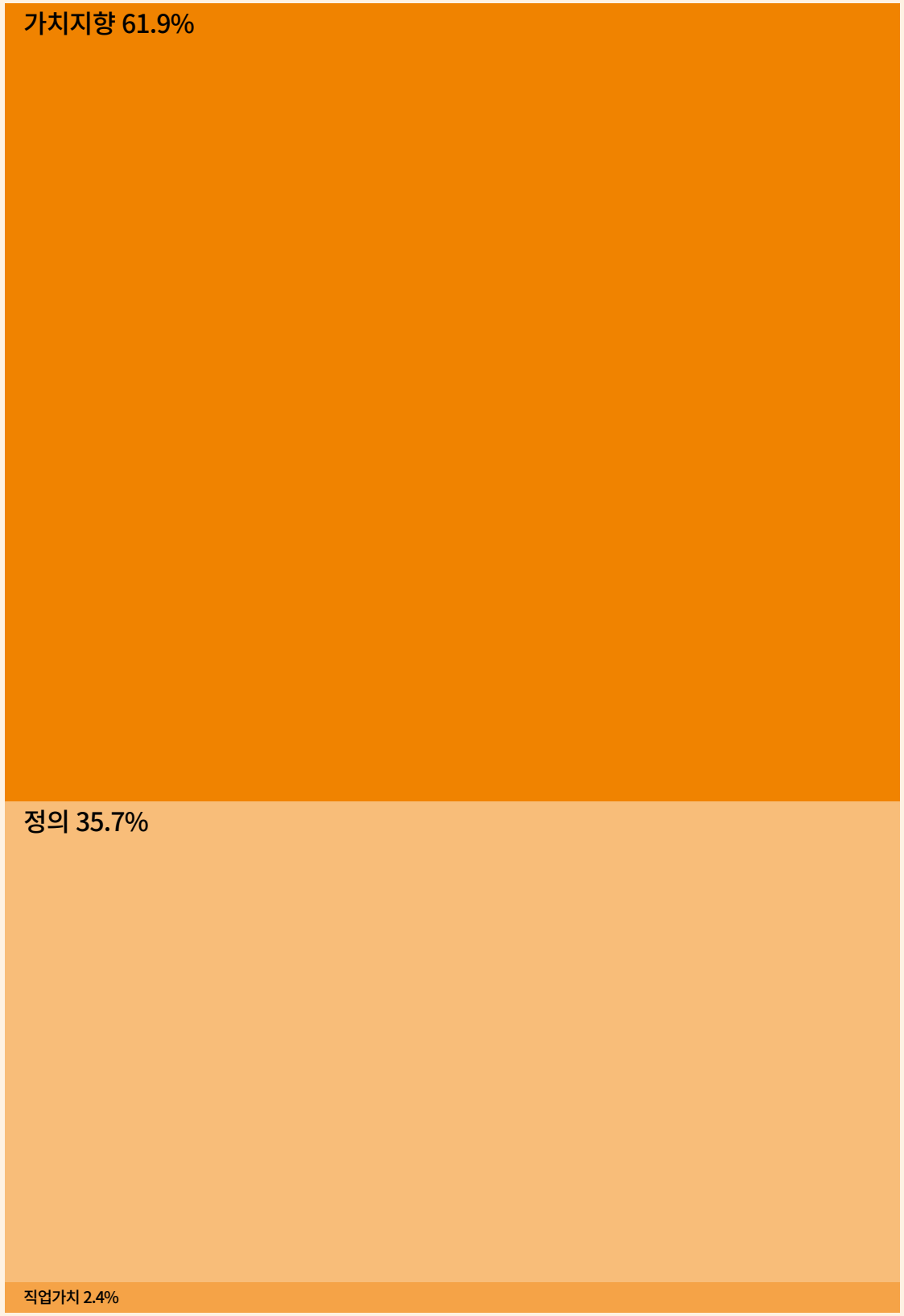
공동체와 신뢰

‘공동체와 신뢰’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개인과 사회, 갈등과 다양성, 과거와 미래를 둘러싼 깊은 성찰을 통해 한국 사회가 회복력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라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하는 문화를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의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구조인가요?”

먼저 ‘공동 가치관’ 영역에서는 돈과 경쟁 중심의 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의와 존엄, 지속 가능한 공동체 시스템을 추구하려는 요구가 나타납니다. 규칙을 지키는 이들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 끊임없는 자기 증명만이 생존을 가능케 하는 직업환경에 대한 회의는, 정의롭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사회적 재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악은 거침없이 나아가는데 우리는 왜 한발한발 내딛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이 드는가?” ‘다양성과 공동체의식’ 항목에서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다양한 존재와 가치관을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문화에 대한 비판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며 누구나 존중받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갈등 대처’에 대한 질문들은 사회의 분열과 혐오를 넘어서기 위한 집단적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로 나뉜 사회 무책임한 정보가 난무하는 불신의 환경 속에서, 타협과 공존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주요 과제로 떠오릅니다. “문화 지체 현상으로 인한 분열, 그리고 분열로 인한 외로움, 외로움을 열매 삼아 자라나는 혐오 정서, 이 사이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최악의 세대? 이런 표현 그리고 이런 세대 나누기 꼭 해야하나요?” 특히 길고양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문제는 공동체의 포용력과 성숙도를 시험하는 상징적 사례로 제기됩니다. ‘공동체 신뢰’에서는 과거에 대한 책임 있는 반성과 더불어,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지 제도적 개선만이 아니라 집단적 양심과 연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운영에 대한 고민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항목에서는 스스로 사고하지 않고 이유 있는 질문을 회피하는 문화, 무분별한 개인주의와 공중도덕의 약화가 공동체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반성이 이어지며 보다 성숙한 시민 의식과 균형 잡힌 개인과 공동체 관계의 회복이 요구됩니다.

결국 이 모든 질문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품고 공동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회복적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을 위한 집단적 성찰이자 실천적 제안입니다.

공동체와 신뢰 질문 빈도 비율



공동 가치관 질문 빈도 비율

공동 가치관

'공동 가치관'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대한민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방향성과,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집단적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가치지향 항목에서는 돈과 경쟁 중심의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속 가능한 공동체 시스템과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들이 제기됩니다. 정의 항목에서는 규칙을 지키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에 대한 무력감과 정의가 예외가 아닌 일상이 되길 바라는 시민의 바람이 나타나며 공동체 신뢰 회복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직업가치 항목에서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입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에 대한 피로감과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질문들은 경쟁과 효율보다 지속가능성과 존엄을, 결과보다 과정의 정당함을 중시하는 사회적 전환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공동체적 정의와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치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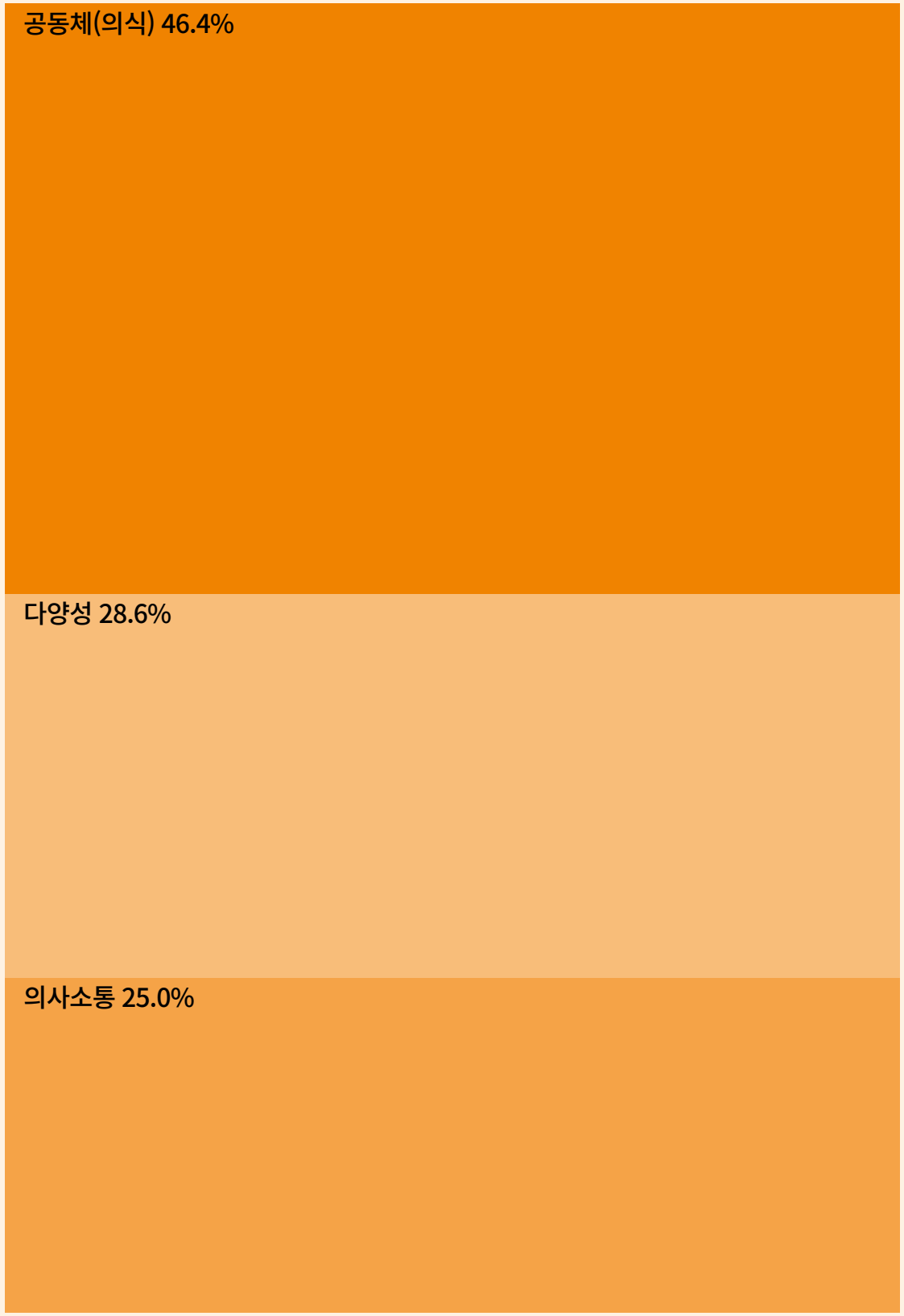
-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을까? (김도연)
- 우리 공동체의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구조인가요? (이유)
- 생존하기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하는 문화를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 (이사랑)
- 우리가 언제부터 따뜻한 마음을 잃어갔는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정민)
-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김동직)
-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정유진)
- 배금주의, 반지성주의 등과 같은 반문명의 시대를 막기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박완식)

정의

- 악은 거침없이 나아가는데 우리는 왜 한발한발 내딛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이 드는가 (유튜브 질문 HSLee-z8v)
- 규칙을 지키며 사는 것에는 왜 보상이 없다고 느껴질까요? (김진민)
- 정의로운 행동이 유별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박준혁)

직업가치

- 살아가기 위해 계속적인 가치 증명이 필요한가요? (RISTTO)



다양성과 공동체의식 질문 빈도 비율

다양성과 공동체의식

'다양성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한국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문화적, 인식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 항목에서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한 현실 속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 가능성을 묻고 있으며 다름을 틀림으로 치부하는 태도와 질문 자체를 회피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관용의 부족을 드러냅니다. 소통 항목에서는 나이, 배경, 입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존중받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과 환경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한국 사회가 획일성과 경쟁 중심의 문화를 넘어서 다양성과 관용, 소통과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적 삶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집단적 성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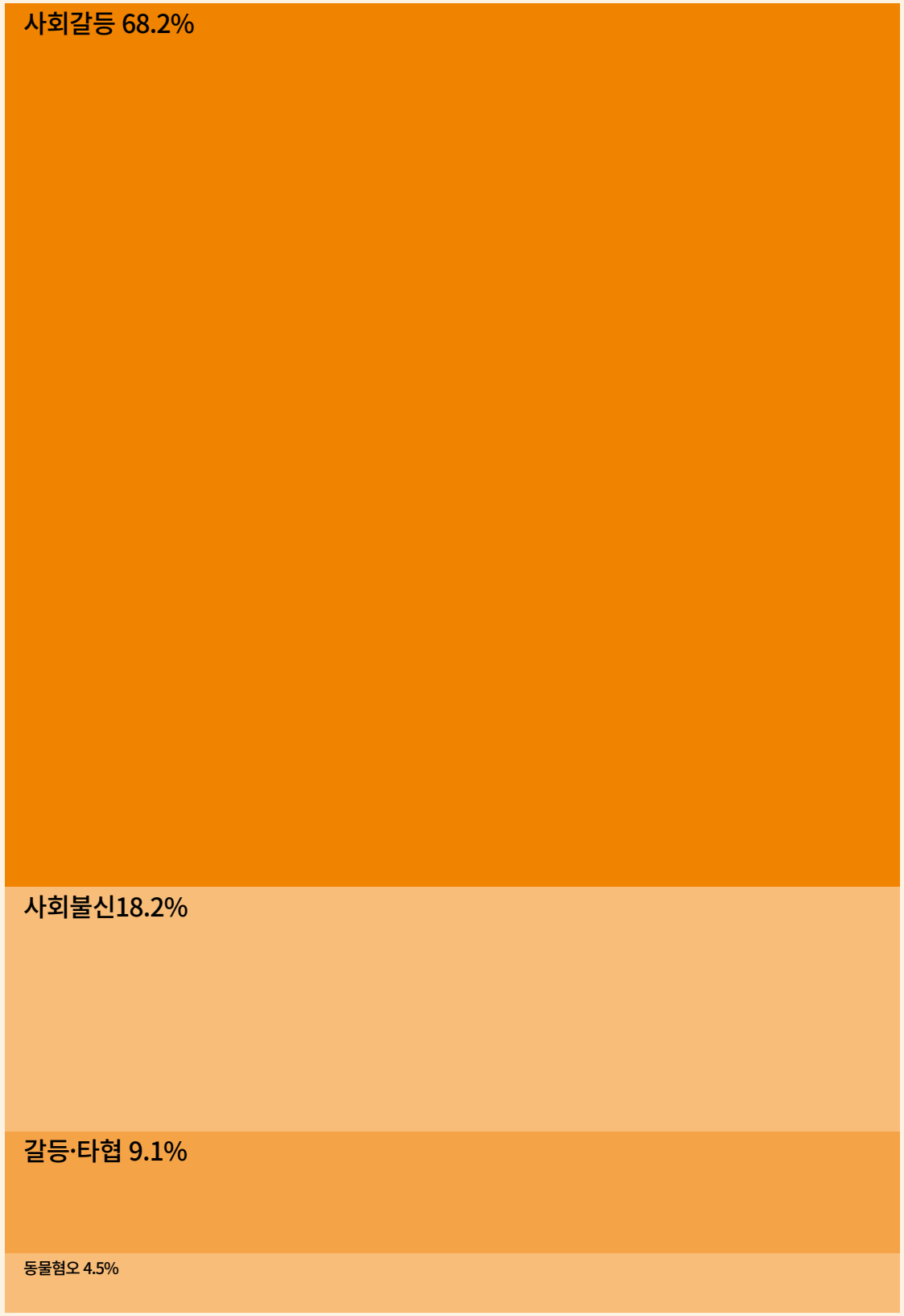
- 다양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가치관을 수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가? (장종하)
- 우리 사회가 점점 타인에 대한 무관심화가 증가되는데, 이것이 옳은 방향일까요? (이정우)
- 상호 공존과 존중의 화합을 이룰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 정말로 어려운 것 인가요? (정성근)

다양성

-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이 아닌 틀린 것이라 생각하는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최준호)
- 한국인은 왜(Why)라는 질문을 터부시 할까? (권재진)
- 한국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같고, 얼만큼 다를까요? 혹은 얼마나 닮아야 하고, 얼만큼 달라야 할까요? (조준근)

의사소통

-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접근성이 좋은 환경에서 사람을 만날려면 한국문화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양지원)
-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기 위한 전제조건들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johnmarin5513)
- 나이가 다르면 친구가 될 수 없나요? (이승혜)



갈등 대처 빈도 질문 비율

갈등 대처

'갈등 대처'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분열과 혐오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신뢰와 공존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묻고 있습니다.

사회갈등 항목에서는 세대·성별 등으로 나뉜 '갈라치기'와 문화적 불균형이 외로움과 혐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지에 대한 집단적 고민이 드러납니다. 사회불신 영역에서는 무책임한 발언과 가짜 정보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책임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타협 항목에서는 고발과 법적 대응 중심의 갈등 해결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공동체 내에서 타협과 조율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제안이 이어집니다. 또한 동물혐오를 둘러싼 갈등에서는 길고양이와 같은 존재에 대한 사회적 혐오를 줄이고 공존의 길을 찾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 모든 질문은 사회가 더 이상 혐오와 단절로 분열되지 않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회복적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회갈등

- 최악의 세대? 이런 표현 그리고 이런 세대 나누기 꼭 해야하나요? (오영훈)
- 문화 지체 현상으로 인한 분열, 그리고 분열로 인한 외로움, 외로움을 열매 삼아 자라나는 혐오 정서, 이 사이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백경재)
- 성별 세대 갈라치기 이대로 괜찮은가? (석은정)

사회불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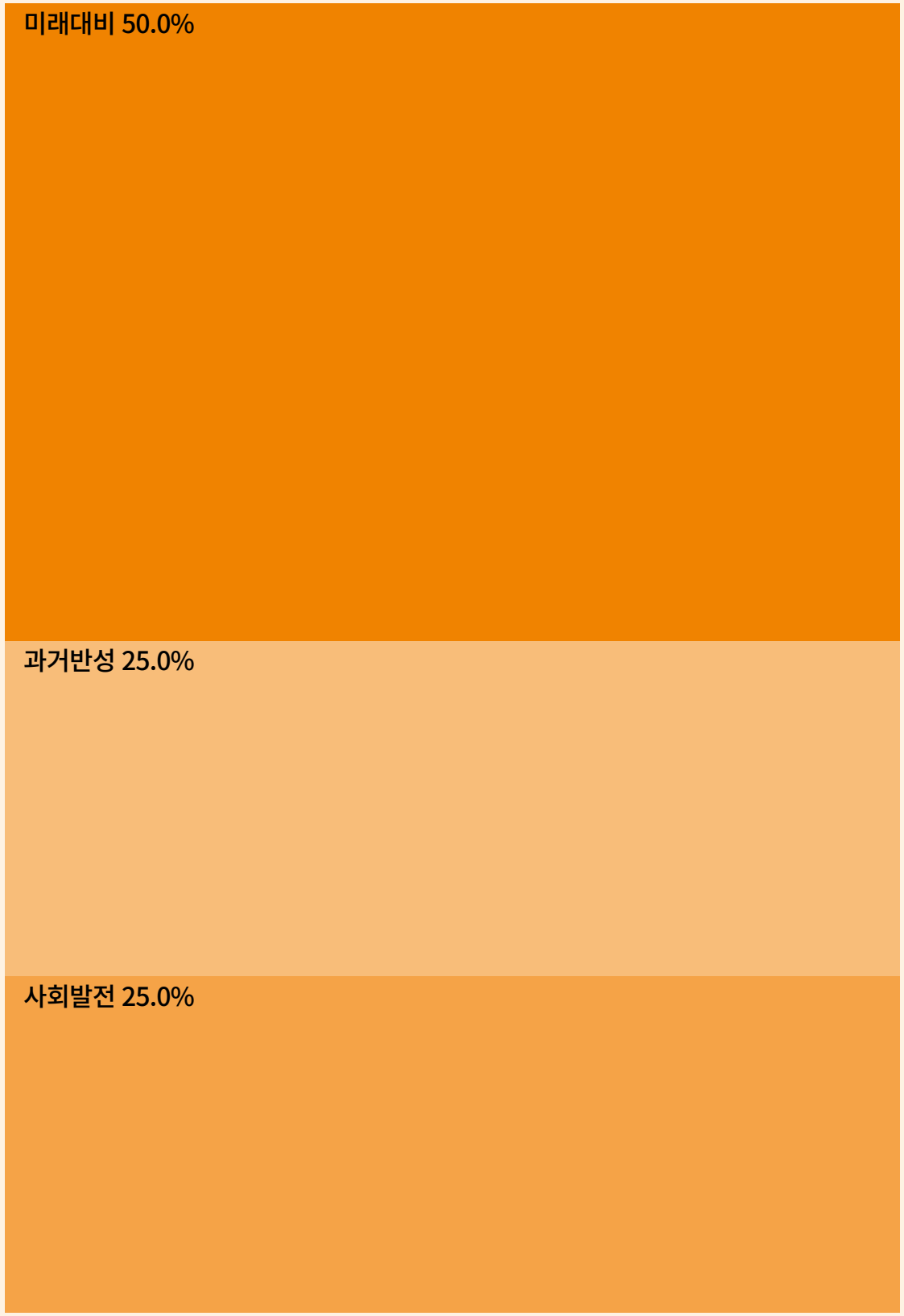
- 무리를 일으킨 자들의 뒤를 쫓으며 어지러운 것들을 치우며 나와 선량한 집단이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도록 이 문제를 제발 이 사회는 풀어야 합니다 (고희경)
- 신뢰를 잃는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김태진)
- 방송, 유튜브, 일반 현수막 에서 책임감 없이 이루어지는 거짓말에 대해 누구나 어떤 단체든 처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신은희)

갈등·타협

- 한국의 고발문화, 이대로 괜찮나요? (박선호)
- 나날이 깊어가는 갈등, 법으로만 해결가능한가요? (박준서)

동물혐오

- 길냥이에 대한 혐오감을 없애고 서로 융화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빠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희수)



공동체와 신뢰 질문 빈도 비율

공동체 신뢰

'공동체 신뢰'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과거에 대한 성찰, 그리고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미래를 살기위해서 기존세대인 우리가 본질적이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것들은 무엇일까요?"

미래대비 항목에서는 현재 세대가 후대를 위해 어떤 본질적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으며 지식과 지혜의 전승, 기초생활 보장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준비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과거반성 영역에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으며 이는 공동체의 도덕성과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과거에 대한 집단적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사회발전 항목에서는 품격과 안전, 그리고 정의로운 공동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이 질문들은 공동체 신뢰의 회복이 단순한 제도적 개선을 넘어 세 대 간 연대와 집단적 책임의식 그리고 성찰적 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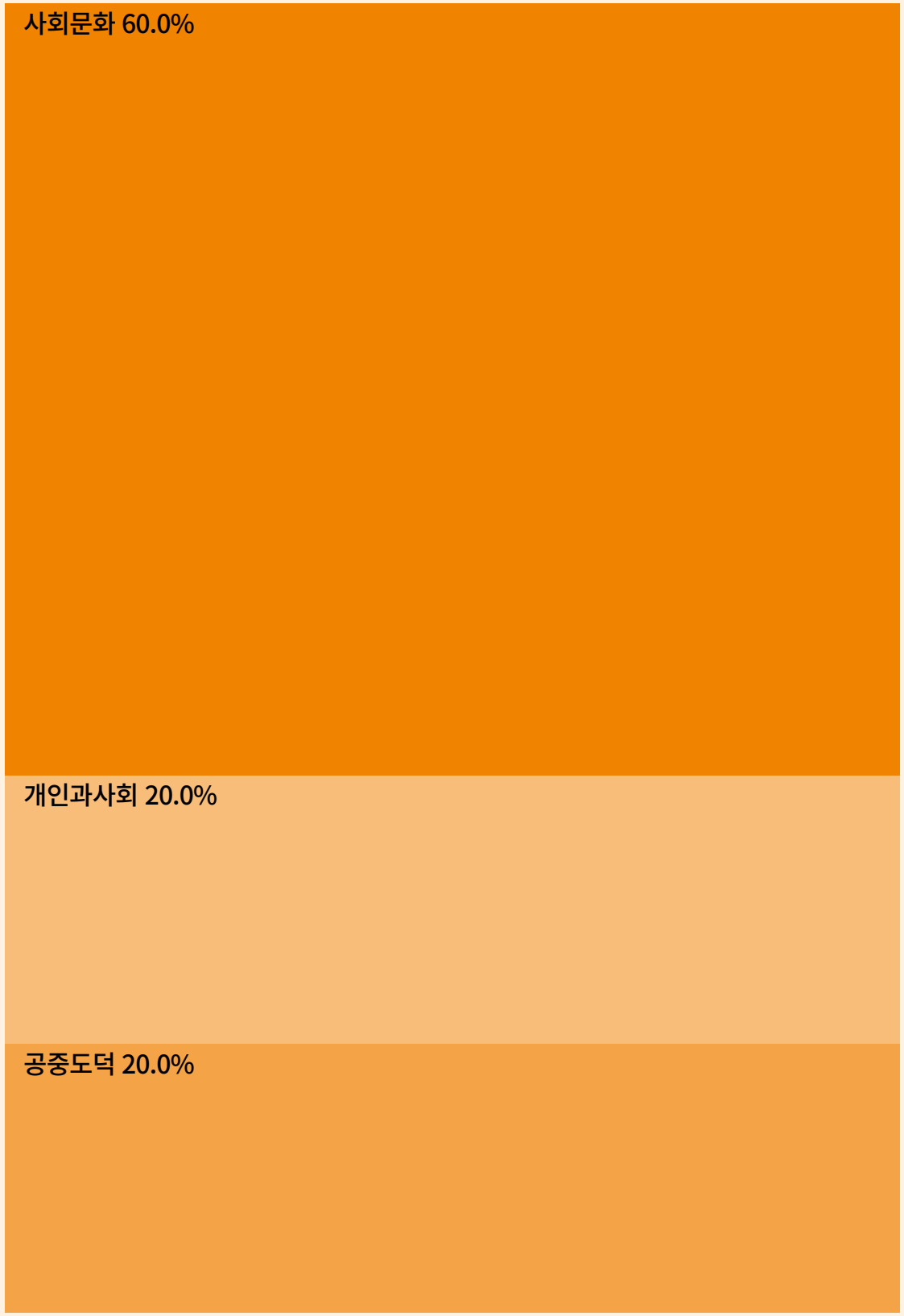
- 우리의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미래를 살기위해서 기존세대인 우리가 본질적이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것들은 무엇일까요? (조영재)
- 모든 국민이 기초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세상, 미래의 세대들을 위한 현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김진태)
- 현재의 지식과 지혜를 후대에 전달 할 수 있는 방안은 최선의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남궁진)

과거반성

-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회, 결과에 반성없는 사회가, 긍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표승엽)
- 우리가 만든 세상을 되돌아본 적이 있는가? (유튜브 질문 marinesnow8428)

사회발전

- 좋은 세상이란 무엇일까? (KIM ALBERT D)
- 우리나라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진우)
- 안전한 국가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할까요? (이수진)



사회문화 질문 빈도 비율

사회문화

'사회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공동체 안에서의 사유와 태도,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중질서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항목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이유 있는 대화나 비판적 사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며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문화에 대한 반성과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개인과 사회 항목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기준과 상식이 정립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중도덕 영역에서는 일상에서의 무질서 특히 거리에서의 비매너 행위들이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로 지적되며 더 성숙한 시민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이 질문들은 사유와 실천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 문화를 통해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 왜 우리들은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상무)
- 왜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려 하지 않을까? (이정우)
- 긍정과 희망을 이야기 하는 문화가 필요하겠다 (안상윤)

개인과 사회

- 상식이 통하는 사회,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한숙경)

공중도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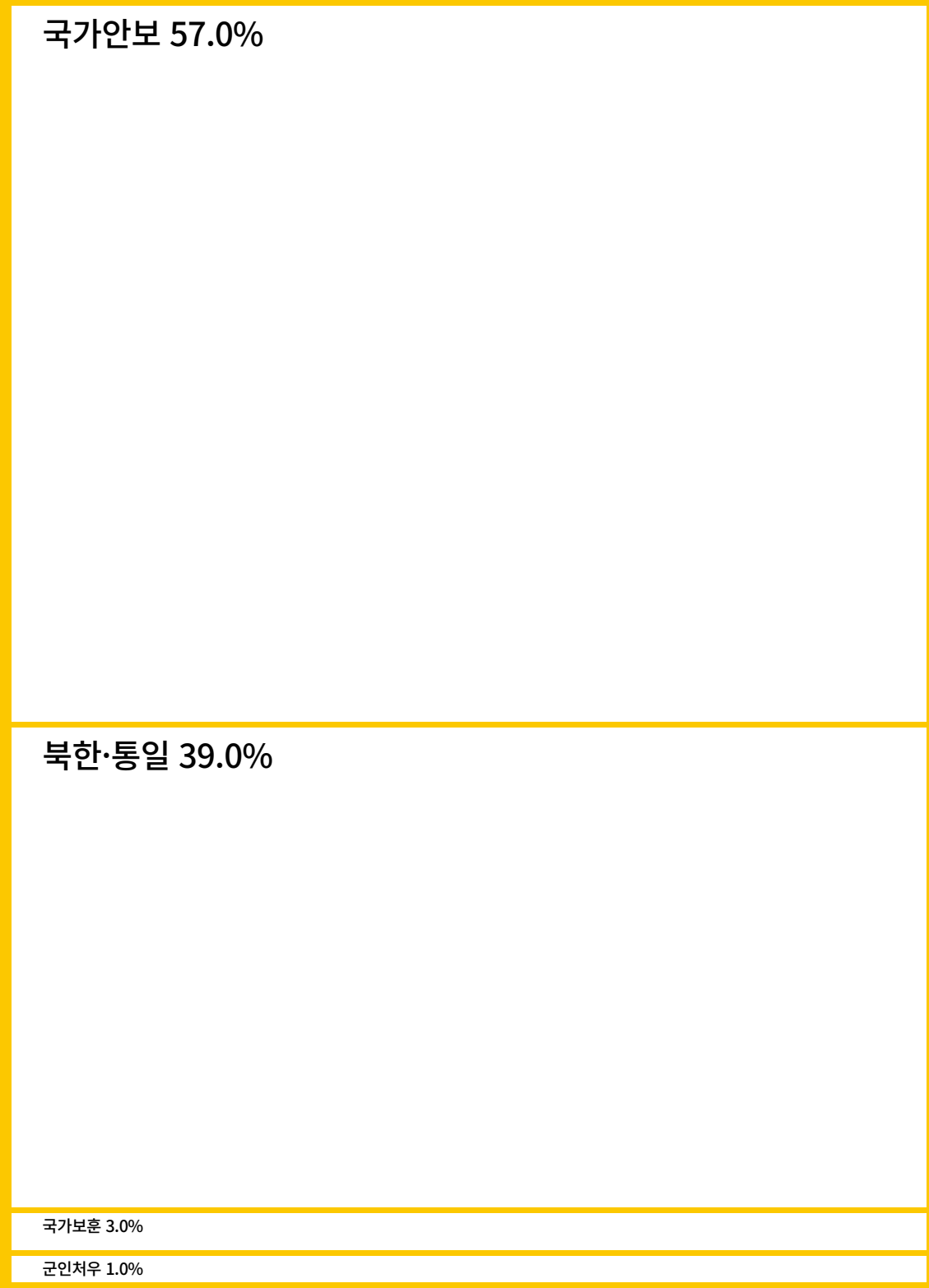
- 담배꽁초 길거리에 버리기 가래침 뱉기 왜 우리나라만 많이 보이는 것 같죠? (김주원)

통일 및 국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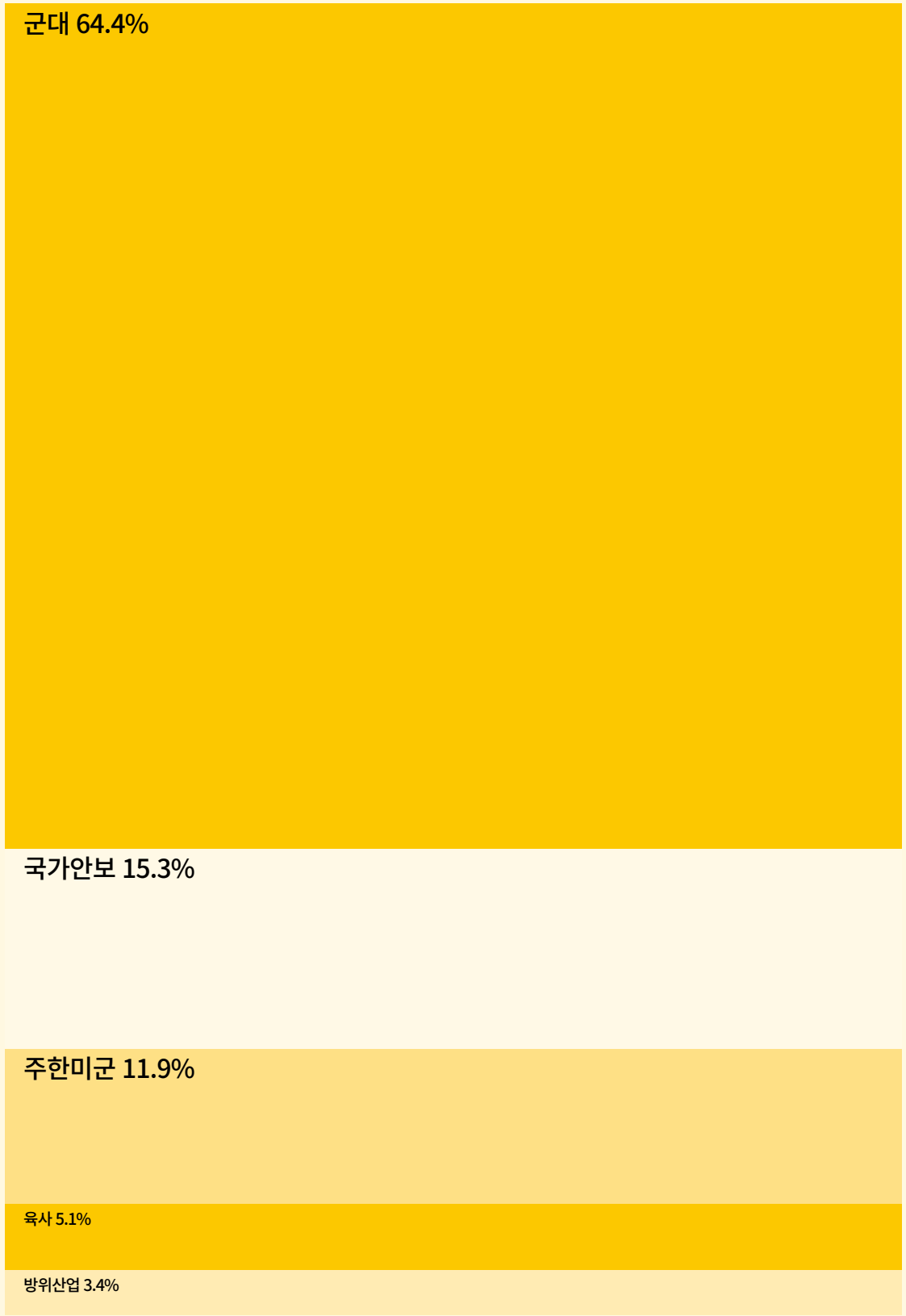
‘통일 및 국방’ 분야의 질문들은 국가안보, 북한·통일, 국가보훈, 군인 복지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안보 과제에 대해 실용적이고도 구체적인 해법을 원합니다.

평화로운 남북관계와 함께 군 내부의 개혁,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한 장기적 전략에 관심이 높습니다. 모병제 전환, 트럼프정부와의 험난한 방위비협상에 대한 대응책, 핵잠수함의 개발 등 안보 담론과 더불어, 병영 내 인권 문제, 부사관의 처우 개선,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면서 국적이 없는 고려인에 대한 포용 등 사각지대에 대한 따뜻한 시선도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12.3 내란후 육사의 존재이유에 대한 시민들의 냉정한 시선입니다. 국가안보의 동량이 돼야 할 청년 장교를 길러내는 곳이 이런 질문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슬픈 일입니다.



통일 및 국방 질문 빈도 비율



국가안보 질문 빈도 비율

국가안보

'국가안보' 분야의 질문들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강한 군사력과 지속 가능한 국방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모병제 전환과 병역 기간 단축, 군 인권 문제를 포함한 군대 관련 질문은 미래 강군의 방향성과 병영문화 개선을 함께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안보 항목에서는 북핵 위협,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전략적 국방 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북미 스몰딜 가능성이 거의 100%가 되어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핵 능력 관련해서 국가 안보를 위한 노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질문은 방위비 분담과 동맹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고 있고,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질문은 내란 사태 이후 그 존립과 교육 방식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군사력, 외교안보 전략, 제도 혁신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안보 구상을 요구하는 시민의식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군대

- 우리나라도 모병제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요? (홍대식)
- 의무병역기간을 1년 미만으로 줄일 수는 없을까요? (성수아)
- 군 사망 사고는 왜 계속 반복되는가? (신혜정)

국가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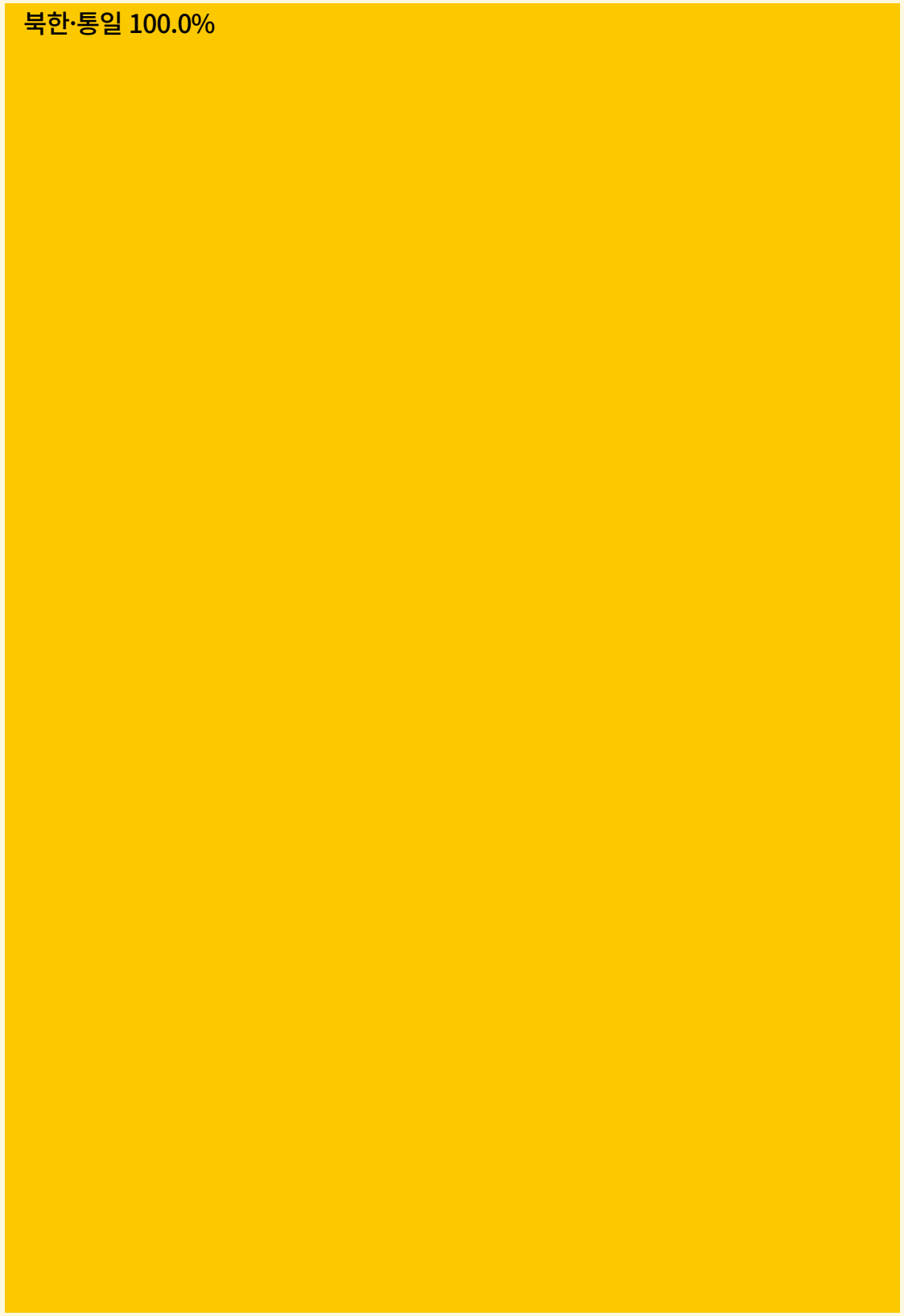
-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방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김종철)
- 북미 스몰딜 가능성이 거의 100%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핵 능력 관련해서 국가 안보를 위한 노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재오)

주한미군

- 다음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감내할 수 있을까? (하태환)

육사

- 육군사관학교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차기수)
- 육군사관학교의 교육과 일반 군인들의 정신교육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조성표)



북한·통일 질문 빈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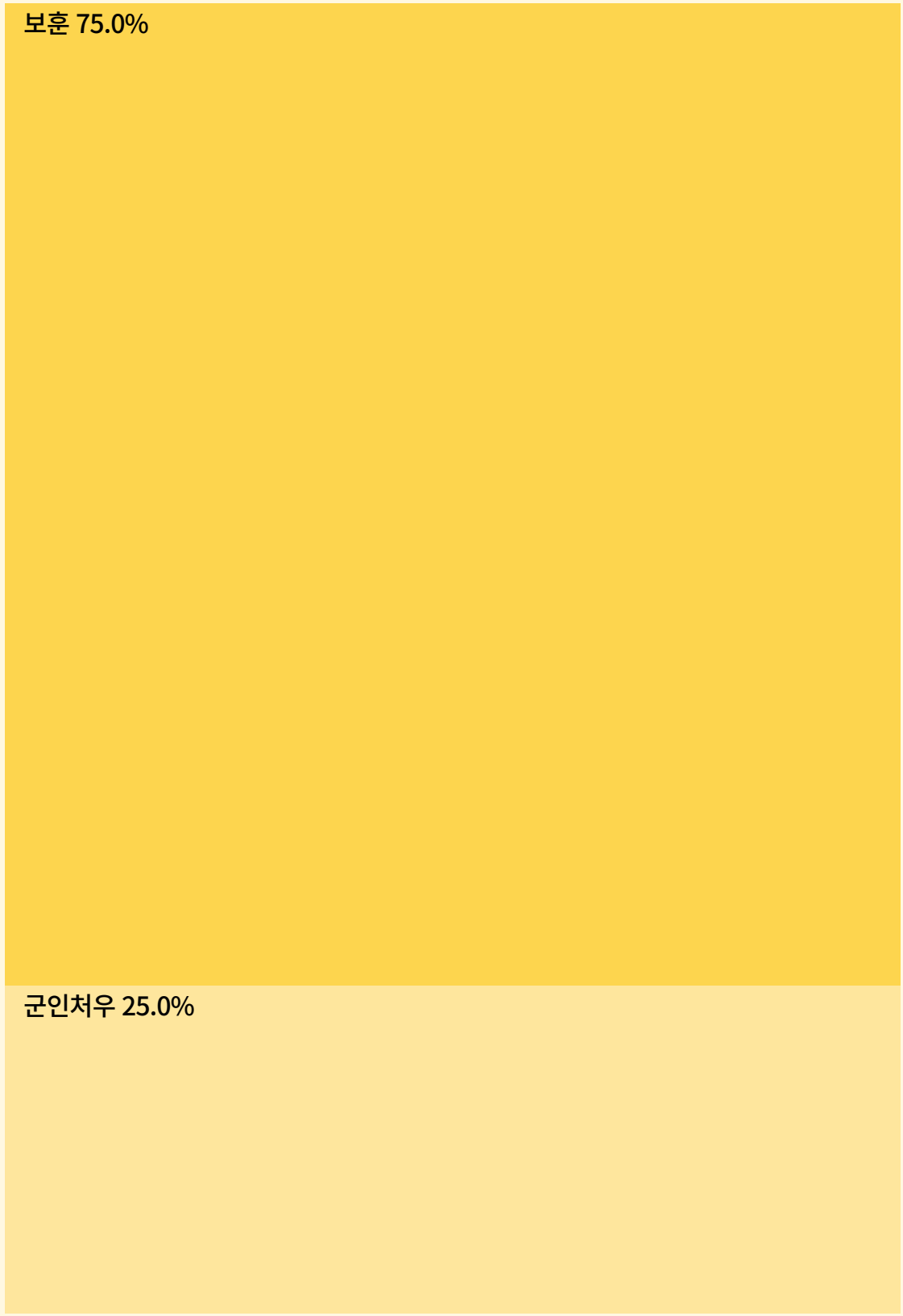
북한·통일

‘북한·통일’ 분야의 질문들은 전쟁 방지와 남북 평화 구축,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시민들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관계 개선을 이루기 위한 방안, 금강산·백두산 등 북한 방문에 대한 기대, 남북철도 및 북극항로 개통과 같은 상징적·실질적 연결에 대한 바람은, 분단의 일상을 넘어서 평화와 호혜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시민적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통일

- 남북한간에 전쟁 발생을 방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평화 통일로 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경석)
- 남북 통일 이전에도 제가 원하는 시기에 백두산과 금강산을 가고 싶습니다. 북한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유적지도 가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윤승현)
- 남북철도 개통, 북극항만 개통은 대한민국 평화통일의 시작이자 끝이 아닐까요? (김영호)
- 다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만은 유지하게 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최영길)
- 통일에 대한 염원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일까요? (김신호)
- 우리는 언제쯤이면 분단의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홍진숙)
- 평화적인 남북 교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제세)
- 아직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이 유효한가요? (신병진)
- 남북 경협, 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김철)



국가보훈 및 군인 처우 질문 빈도 비율

국가보훈 및 군인 처우

'국가보훈' 분야의 질문은 독립운동가 후손과 같이 역사적 공헌이 있음에도 제도 밖에 놓인 이들을 위한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있으며, 국적·신분에 관계없이 그들의 희생과 기여를 포용할 수 있는 더 넓고 정의로운 국가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인처우' 분야의 질문은 병사 월급 인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사관 및 장교 등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군 전체의 사기와 형평성을 고려한 보상 체계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훈

-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면서 국적이 없는 고려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요? (방가영)
-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의병제대 후 보훈병원에 7급 결과를 받았으나 보훈처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대학병원마다 다른 기준으로 심사하는 걸까요? (김태원)
- 안중근 의사 유해를 찾아주시나요? (임재완)

군인 처우

- 장병들의 월급은 오르는데 직업군인을 선택한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의 월급은 왜 안오르나요? (윤지영)

오늘 필요한 질문

‘오늘 필요한 질문’은 시민들이 직접 사회 전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를 통해 공동의 의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모두의 질문을 상징하는 샘플 질문입니다. 2025년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착한 모두 6315개의 질문 중에서 2025년 대한민국에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추천 질문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모두의 질문이 되기를 희망하는 오늘 필요한 질문입니다.

단순한 주제별 정리를 넘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출발한 질문들이 무엇일까를 보여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필요한 질문’은 대한민국의 조용한 다수,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당대의 한국 사회가 어떤 고민과 희망을 품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올바르면서도 시의적절한 정책과 담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질문의 힘’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필요한 질문

정치 및 거버넌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뽑고 해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회 및 복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정말 사라져야 할 존재일까요?
법과 윤리	범행 액수가 300억 이상인 경제 사범은 왜 모두 형을 살지 않지요?
교육과 입시 제도	우리 아이들은 언제까지 입시 전쟁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느린 학습자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정책은 없나요?
경제 및 산업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농협의 공적 기능이 작동하고 있나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도시 및 주거	청년들도 근로소득으로 집을 사는 세상, 만들 수 있을까요? 전세 사기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가요?
노동 및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과 차별을 해소할 대책은 뭔가요? 40대, 50대의 갑작스러운 퇴직 후 재취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족과 라이프스타일	오직 혈연관계만이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마땅한가?
문화 및 미디어	언론은 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건강과 의료	지방 및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이 심각한데 정부의 해결책은?
환경 및 기후변화	해마다 녹조로 범벅되는 낙동강 보는 왜 열리지 않나요?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국제관계 및 외교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디지털 사회와 정보화	포털도 이제는 그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과학기술과 혁신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공동체와 신뢰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통일 및 국방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방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세상에 이런 질문

'세상에 던져진 질문'에는 때로 웃음이, 때로 통찰이, 때로는 깊은 절망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재미·기발·공감'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누어 살펴본 21개의 질문들은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감정과 생각의 풍경을 다채롭게 보여 줍니다.

누군가는 '0칼로리 피자'를 원하고, 또 누군가는 '계엄 트라우마를 잊지 않게 사연집을 만들자'고 말합니다. 뒷담화의 경계를 묻는 유쾌한 고민도 있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36년간 돌본 한 아버지의 절규도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단지 웃기거나, 신기하거나, 마음 아픈 사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질문이기에 가능한 말들, 질문이기에 열리는 사회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재미

1. 뒷담화는 범죄일까요?

저는 가끔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흔히 '빌런'(여러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에 관하여 흉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간혹 미디어를 보면 다수가 한 사람을 욕하는 것을 범죄 행위로 묘사하는데요. 그러한 장면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을 성찰하게 되며 제가 친구들과 함께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한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또 저희가 빌런이라고 부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빌런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만 그 사람을 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뒷담화를 단순한 수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고 봐야 할까요? 법과 윤리, 이우진

2. 전 국민에게 MBTI 테스트를 실시하면 안 되나요?

나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나아가 나 자신과는 다른 이웃들을 배려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기르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동체와 신뢰, 서동철

3. 정치를 AI가 하면 안 될까요?

더 이상 사람의 정치를 못 믿겠습니다. 사람은 단지 올바른 정보를 넣어 주는 역할만 하고, 판단은 AI가 내려 정치하게 해 주세요. 정치 및 거버넌스, 이영진

4. 인형 뽑기 기계가 사기를 너무 치는 것 같아요.

인형 뽑기, 아시죠? 모든 인형 뽑기 매장의 기계들은 집게로 인형을 조금 들었다가 놔 버리는데 이건 사기죄,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법과 윤리, 송민석

5.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0kcal 피자는 못 만드나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사람이 달나라에 가고 AI가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세상인데 왜 고작 0kcal 피자를 못 만들죠? 기왕이면 맛과 향은 '도ㅇㅇ피자'랑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피자 좀 만들어 주세요. 건강과 의료, 손소희

6. 왜 남자 화장실을 여자가 청소하나요?

남자로서 여자가 화장실에 청소하러 들어오는 것에 수치심과 불편감을 느낍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안 그러던데 왜 지하철 화장실은 다른가요?
가족과 라이프스타일, 한진희

7. 왜 로또 복권 추첨은 전 국민이 투명하다고 생각할 만큼 관리하지 못하는 걸까요?

로또 복권 관리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해 주세요. 사회 및 복지, 김영호

기발

1. 동티모르에 우주 발사 기지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곳으로는 적도 지역이 바람직하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와 경도가 같고 적도 지역에 있는 동티모르를 역외 영토로서 장기 임대하여 우주 발사 기지를 설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도 해안을 배경으로 한 발사 장면을 관광상품화해 주변을 종합 관광단지로 만들면 발리 못지 않은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동티모르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주기지 주변에 공항, 항만, 시설 경비 군함 등을 배치할 수 있으며 로켓, 미사일 제조 공장을 역외에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호주와 연계하여 미사일 발사 실험장도 구축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 과제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기술과 혁신, 이민식

2. 예쁜 여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비정상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남성들은 여성에게 외모 혹은 이성 관계에 대한 표현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강요받는 기이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표현이 극도로 제한되고 여성과의 진솔한 대화 자체가 아예 차단된 상황입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이성을 만나 교제하는 기회를 갖기가 힘들어집니다. 결혼과 출산이 급격히 줄어들어 망해 가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어쩌면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극단적 페미니즘에 따른 주장이 늘어나고, 불순한 의도의 허위 미투와 이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인 재판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이를 부추기고 악용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힘이 무책임한 언론들과 함께 남성 혐오와 남녀 갈등이라는 크나큰 재앙의 씨앗을 퍼트려 놓았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앞서 대거 히키코모리로 전락해 사회적 에너지를 상실했듯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쓸데없는 남녀 갈등에 에너지를 소모하느라 점점 지쳐 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남녀가 함께 힘을 다해 꾸준히 달려온 결과 K팝을 비롯한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성과를 거둬 왔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로 인해 없어질 가능성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녀 갈등이라는 역병이 퍼진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남녀가 다시 힘을 모아서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극한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재정비하고 리부팅하는 데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가족과 라이프스타일, 이희수

3. 이 시대에 새로운 질문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의 질문Q〉에 올라온 질문의 99%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시민들이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 개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국회의원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시민 참여 민주주의로의 개선, 유전 무죄인 사법 시스템과 검찰 개혁, 언론 개혁,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살 수 없는 아파트의 가격, 모두 익숙한 화제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외쳐 왔고 때로는 목숨을 바쳤습니다. 과거의 그 수많은 질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 날려 버리고 다시 질문을 모으는 것입니까? 이제서야 질문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것입니까? 더 이상의 새로운 질문은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해결해야 할 질문들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기타, 신상윤

4. 노인이란 단어를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고령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임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의 시작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바꾸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학이 더 발달되면 100세 시대가 130세 시대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들 예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노인'이란 단어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노인은 지역사회에서 존중을 받아 왔습니다. 평균연령이 지금보다 낮았을 때 오래 산 사람에 대한 공경과 예를 그렇게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이보다 노인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최근 들어 노인들은 타자의 시선이 그리 달갑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 타자들 또한 곧 노인 세대에 합류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노인'이란 단어를 타자에게 배척되지 않을 만한 단어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 및 복지, 박병복

5. 계엄으로 내란성 우울증을 겪었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엄 이후,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근로 의욕도 사라지고 소비 욕구도 사라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을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윤석열에게 청구하고 싶습니다. 정치 및 거버넌스, 양미순

6. 무작정 금연 구역을 늘리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개인적으로는 흡연 구역 혹은 부스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죠. 당장 떠오르는 공공장소의 흡연 구역이나 부스는 구청에 있는 사실상 방치된 흡연 부스, 병원 혹은 장례식장에 있는 흡연 구역, 휴게소의 흡연 구역 정도입니다. 실제로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 구역이 아니지만 흡연 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제가 '회색 구역' 또는 '그레이 존'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흡연자분들은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죠. '흡연 구역을 지정하거나 부스를 설치하면 뭐 하냐, 거기서 안 피우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흡연 구역이나 부스가 떡하니 존재해야 그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담배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고 판매 금액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죠. 건강을 위해서라며 판매를 금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을 올리고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담배 포장지에 넣는 것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담배 판매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으로 흡연 구역을 지정하고 흡연 부스를 설치해,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및 복지, 홍가람

7. 자녀 돌봄 휴가는 있는데 왜 부모 돌봄·부모 공경 휴가는 없는 걸까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대, 효의 사상이 뿌리내린 대한민국에 어찌하여 자녀 돌봄 휴가만 존재하는 겁니까? 노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많은 시간을 씁니다. 저녁 이후보다는 낮 시간에 챙겨 드리고 어딘가로 모셔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섬길 수 있는 휴가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나라의 기틀이 바로 섭니다. 가족과 라이프스타일, 오기수

공감

1. 간호사였던 아들의 자살, 막을 수 없었을까요?

1년 전 아들이 우리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와 아내와 딸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간호사였던 아들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풀어야 할 사회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몇 자 적어 봅니다.

아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간호사가 되겠다며 전북대 간호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평소 착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들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여 우리 부부는 적극 동의하였습니다.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간호사 자격증을 딴 아들은 전북대 병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한 지 2개월쯤 됐을 때, 평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내색하지 않던 아들이 '병원 생활이 너무 힘들다', '같이 근무하는 5년 차 선배가 예전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다고 한다'며 출근하는 게 무섭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혹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병원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했고,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2년간 요양병원 야간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며 간호직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중 지난해 2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간호사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싶어 했던 아들의 소박한 꿈이 무너지는 걸 본 저는 이게 아들의 잘못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들과 같은 학과에서 공부하고 전북대 병원에서 근무하던 동기들 말에 따르면, 아들이 발령받은 부서는 1년에 10명 이상 충원되지만 1년 후엔 그중 1명 정도 남는 악명 높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의사 정원 확대 문제로 전공의·수련의들이 그만두었을 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생각했는데,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의 처지가 이렇듯 비정상적이라면 좋은 의료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여 병원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직장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들같이 좋은 뜻으로 간호사가 되고자 했던 이들이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병원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사회 및 복지, 김용규

2. 여성복의 '프리 사이즈'는 왜 평균 신체 사이즈인 M보다 작은 걸까요?

「경향신문」의 기사 〈'프리사이즈', 여성을 재단하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복, 특히 젊은 여성들이 주로 구입하는 브랜드 의류의 39%가 프리 사이즈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는 남성복의 프리 사이즈 비율(7%)보다 높고, 특히 해외의 유명 SPA 브랜드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입니다.(세계적 의류 브랜드 Zara와 H&M의 여성복 중 프리 사이즈 의류는 전체의 0.09%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복은 사이즈의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남성복은 하나의 디자인당 평균 3.3종의 사이즈가 존재하지만, 여성복은 평균 2종의 사이즈만이 존재합니다.

「중앙일보」의 기사 〈'프리' 없는 '프리사이즈' 옷, 다이어트 압박 부추겨〉에는 온라인쇼핑몰 10곳과 서울 대학가 매장 8곳의 의류를 조사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여성복의 S~L 사이즈가 모두 한국 산업 표준 규격상으로는 S 사이즈에 해당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장년층 브랜드에도 프리 사이즈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시장의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상식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여성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0대 여성 거식증 환자가 97.5% 증가했습니다. 또한 식이장애 환자의 80%가 여성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실제 비만율은 28%인 데 반해 주관적 비만 인지율은 90%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작게 제작되는 의복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미세먼지처럼,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을 알게 모르게 가중시키는 원인일 수는 있겠지요.

중소·영세 업체 중 의복(속옷 및 신발 포함)의 사이즈를 다양하게 제작하는 업체는 여성 친화 기업으로 인증하여 각종 공공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세액을 공제하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경향신문 기사에 인용되었는데, 그는 한국에서 겪은 문화충격 중 하나가 "의류, 특히 여성복에 대개 한 가지 사이즈가 붙어 있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성복의 사이즈를 다양화하면 한류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 및 복지, 류이현

3.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위한 24시간 돌봄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폭력 행동이 심하고 언어 소통이 되지 않는 36세 최중증 발달장애인 아들을 돌보고 있는 70세 아빠입니다. 36년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아들을 돌봤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의 사정을 진지하게 들어 주세요.

우리 아들은 돌이 지난 후부터 현재까지 부모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모든 물건을 부수고, 찢고, 버립니다. 하루에도 몇 벌씩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버리고 신발도 신을 수 없을 만큼 찢습니다. 음식을 통째로 싱크대 하수구에 버리고는 주워 먹습니다. 자신을 주간보호시설로 태워다 주는 아빠의 옷을 모두 벗기는 바람에 다시 옷을 입는 과정에서 매우 위험한 순간을 맞게 하기도 합니다.

이를 제지하려 하면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상대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누나는 코뼈가 부러졌으며, 사촌 동생은 턱뼈가 어긋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들이 하는 문제 행동을 제지할 수 없어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니 부모로서는 속이 타들어 갑니다. 시설 선생님들도 너무나 힘들어하십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의 건강이 무척 나빠지고 있습니다. 눈가의 다크서클이 점점 진해져 가고 있고, 얼굴과 몸에 염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체중은 100kg 가까이 됩니다. 저와 제 아내 또한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서 돌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부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까닭은 중증장애인이 도전적 행동을 할 때 이를 수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해서 손이나 몸을 잡을 수 없으니 잘못된 행동을 제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아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부모와 선생님들의 인권도 짓밟히는 실정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은 진정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사회 및 복지, 오춘분

4. 개인의 '행복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정부는 개인들의 다양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개인의 삶은 스스로 채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지?'라는 의문은 모든 개인이 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강의 범위에서 도출된 결론이나 방법 등이 공유된다면 사람들이 맨땅에 헤딩하듯 처음부터 각개전투를 벌이지는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및 복지, 김광용

5. 항공기 승무원은 운동화를 신고 일하면 안 될까요?

항공기 승무원은 장거리 비행에 나설 경우 평균 1만 5000보 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구두를 신고 일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일할 수는 없을까요? 승무원은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비상 상황에는 승객 탈출을 지휘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폭력적인 승객을 제압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구두보다는 운동화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및 고용, 편선화

6. 12.3 계엄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그날 개개인의 사연을 담은 사연집을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집회에 나가 혼자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12.3 계엄 당시 개개인의 경험,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계엄 트라우마'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의도로 향했던 사람들, 집에서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 자다 깨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던 사람들, 아직도 헬기 소리만 들으면 무서워서 뉴스를 찾아본다는 사람들. 이 국민적 고통을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각 개인의 사연을 담은 책자를 만들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모든 국민이 알게 모르게 겪고 있을 계엄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및 거버넌스, 임경민

7. 비만은 병인데, 왜 여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나요?

바야흐로 '비만의 시대'입니다. 성인 10명 중 4명, 청소년 6명 중 1명이 비만 상태라고 합니다. 비만은 질병으로, 단순히 개인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의 원인이 의지 부족이나 개인의 책임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 적시에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만성질환과 연결되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정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2018년 1차 비만 종합 대책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후속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아 비만에 대한 관리 강화, 비만 관리 종합 대책 수립 등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구축에 관심을 갖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압니다. 추가사안을 제안합니다. 바로 비만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혁신적인 비만 치료제가 연이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만 문제가 여전히 미용의 영역,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처럼 비만 또한 대물림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식단 관리와 운동을 할 여유가 없는 상대적 취약계층이 겪는 중증 비만의 치료에는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비만 양극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건강을 차근히 쌓아 올리는 '보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의 비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과 의료, 정수연

질문 2025

전문가

‘전문가’는 각 분야의 전문가 45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를 진단하고, 지금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어떤 배경과 딜레마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며, 그 안에 담긴 구조적 병목과 시대적 전환점을 함께 짚어냅니다. 또한 전문가로서 현실적인 대안과 전략까지 제시하며, 질문을 넘어선 정책적 제안으로 이어집니다. 이 장에 실린 질문들은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구조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 기존 제도를 넘어서는 시야, 정쟁이 아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받은 질문은 단순한 비판이나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정책 담론의 씨앗이자, 오늘을 성찰하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사회적 지식 자산입니다.

전문가 인터뷰 목차

1	국민에게 민주당이 낫다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까?	한국사람연구원 원장 정한울
2	민주적 사회 통합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호기
3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도전적 시행착오가 가득한 혁신 국가, 'Scale-up Korea'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동
4	선진국의 함정에 빠진 한국, 살아날 길은 무엇일까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권석준
5	지난 62년와 변화와 비교해 볼 때, 향후 5년 후의 변화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홍성국
6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반한 자신감으로 북한의 안보 딜레마까지 고려해 주는 상호 경제·안보 협력을 한다면 어느 순간 통일도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7	남북한 갈등이 대한민국에 유익합니까?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 김형덕
8	대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은 포기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인생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방현석 소설 「범도」 작가
9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정상화하고, 친일 반역자 문제와 뉴라이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호사카 유지
10	인구절벽으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 건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아닐까요?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이용민
11	민군(民軍) 융합의 시대, 이제는 민과 군이 Win-Win하는 거버넌스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 유형곤
12	경제성장률 3%도 쫄리나요?	K먹사니즘본부 본부장 주형철
13	21세기 최첨단 산업사회 효율성에 맞게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사회가 너무 후진 거 아닙니까?	글로벌정치연구소 소장 홍기빈
14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수명은 반도체 수명과 같이 가며, 지금까지의 인계철선은 38선이었지만 앞으로는 반도체 라인이 될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1위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전병서
15	왜 기업가형 혁신 창업 국가를 추구해야 할까요?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장표
16	우리나라의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이 인류의 문제를 푸는, 인류 전체에서 최상위권에 드는 기업이 되려면 대한민국 정부는 무얼 지원해 주어야 할까요?	류중희
17	혁신 성장을 위한 리더십과 거버넌스 운영, 가능합니까?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하준경
18	서울만으로 대한민국 경제, 미래는 있을까요?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표 김판건

19 미국이나 중국에서와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왜 재벌 후손이 아닌 새로운 큰 부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존리의 부자학교 대표 존리
20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공무원들의 정책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은 왜 점점 악화되고 있나요?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현기
21 얼어붙은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혁신적인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태범
22 공동체 자치와 기업체 협력 없이 행정의 역량만으로 사회문제 대응이 가능할까요?	더가능연구소 정책실장 이영재
23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나라 살림을 아끼려고 합니까?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4 50만 명 이상 지방 대도시에, 왜 대도시에 걸맞은 재정과 행정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임승빈
25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의 장기적 위기, 이제는 민주적 통제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성욱
26 퍼 주는 정부보다 알뜰하게 쓰는 정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창률
27 AI 기본법 등 신기술 법률에 왜 '온라인으로' 직장인, 재외국민, 청소년, 이동 장애인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나요?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 이재흥
28 우리도 AI 경찰 어때요?	더불어민주당 마포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
29 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요?	고려대학교 정치사회학과 교수 김윤태
30 '기본 사회'가 혁신과 도약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요?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은민수
31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을 알고 있으면서 왜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나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조돈문
32 조선소는 왜 최저임금만 주나요?	「쇳밥일지」 저자 천현우

33 돌봄 문제 해결 없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요?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다영
34 사회 대전환! 100세 사회를 위한 플랫폼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뉴스투데이 회장 민병두
35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는데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강경훈
36 작은 방송사와 제작사, 비인기 장르 콘텐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방송의 다양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할까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책임연구위원 강신규
37 지역 단절·통행 방해·소음공해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 온 지상 철도 지역 시민들, 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도시 대개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 장재민
38 '생각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는 현행 입시 제도에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면 AI와 극단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요?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권정민
39 10년 뒤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공교육 시스템 이대로 괜찮을까요?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 홍인기
40 생성형 AI 시대에 지금처럼 주입식 교육으로 배워도 되는 걸까요?	모두의연구소 대표 김승일
41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획일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까?	명지병원 임상교수 김현수
42 미래세대 및 우리와 함께 살아갈 지구 생명 공동체들을 대표하고 이익을 만들어 갈 헌정 체제(제4부 '미래심의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안병진
43 온실가스 감축 계획만 수립하고 실행은 못 하는 우리나라, 더 늦기 전에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이유진
44 그간 우리나라가 일궈 왔던 한강의 기적이 화석연료 문명과 공멸하지 않으려면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후솔루션 팀장 오동재
45 1500만 대의 가스보일러로 탄소중립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왜 히트펌프를 고민하지 않을까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권필석

국민에게 민주당이 낫다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까?

정한울 박사
한국사람연구원 원장

1. 질문의 맥락

민주당은 국가적 도전 과제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❶ 정국 안정

정국을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비상계엄 이후 경제적 타격, 일반 시민들의 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신속히 탄핵 결정이 되어 다음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야 합니다.

❷ 탄핵 여론의 반전

2024년 12월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가결에 대한 찬성 비율이 73~78%로 압도적이었으나, 신년 들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로 나타난 조사가 있습니다. ARS 조사 방식에 따른 보수층 과표집이 나타났고 문항의 특정 표현이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 탄핵과 체포 수사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위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여론은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보수층 재결집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 보수층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최대한 결집해서 대응해야 하며 분열하면 필패한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후순위로 밀렸던 민주당 비토 요인이 윤 대통령의 체포 이후 본격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국정 안정과 정상화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묻는 경향이 강해질 것입니다.

내란죄와 탄핵을 연결했던 민주당의 프레임이 보수층 결집에 명분과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 당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권력을 비헌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인식을 상당수의 보수층이 공유했습니다.
- 내란죄는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인데, 이에 대해 윤 대통령과 친윤 세력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며 계엄 선포는 경고이자 해프닝일 뿐 내란 의도를 가진 행위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민주당은 탄핵 소추 근거에서 내란죄를 제외했고, 이는 보수층 결집의 논거로 작동했습니다. 내란죄를 근거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인정한 것이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탄핵 또한 무효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강행 분위기에 반발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가 민주당 우세에서 국민의힘-민주당 균형 국면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차기 대선 주자로 이재명 대표를 상수화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대한 대비나 그 외 예비 후보들의 경쟁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선 출마를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강행하려 하는 것이라면 이는 비상계엄 못지않게 비헌법적인 행위로, 시민 저항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❸ 누구나 공유하는 공동체 의제 설정

국가적 도전 과제에 막대한 재정과 노력을 투입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보와 보수 정부 모두의 책임입니다.

- 인구가 줄면서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될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는 반면 지방은 공동화되고 있어 지방 소멸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❹ 민주당의 신뢰 위기

국가적 도전 과제를 민주당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 국민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일하게 무능하다고 느낍니다.
-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 탄핵 사태를 일으킬 대통령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등의 '큰 사고를 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기도 하지만, 국가적 도전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가운데, 국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 국가적 도전 과제는 실력 있는 정부가 안정적으로 집권해 나가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민주당이 국가 리더십을 발휘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❶ 민주당의 통렬한 자기반성 필요

자기반성과 문제점 진단을 하지 않은 민주당이 국가적 도전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자문해야 합니다.

- 민주당은 촛불 탄핵으로 집권하였으나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 20년 집권론도 언급되었던 상황에서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으면서도, 처절하고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거나 문제의 지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❷ 이탈 보수층을 포용할 탄핵 프레임 개발

계엄 초기, 탄핵에 찬성했던 이탈 보수층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프레임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❸국민과의 소통 강화

국가적 도전 과제와 해법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 국민들은 각자 힘겹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도전 과제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으므로, 정치권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고심한 뒤 국민들에게 이를 제안하고 끊임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❹ 리더의 생각 변화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올바른 리더십이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정보화 사업, 한일 관계 등의 국가적 도전 과제를 정리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했으며 중단 없이 과제를 완수하는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국가적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❺ 과거가 아닌 미래 준비가 중요

국가적 도전 과제를 설정할 때는 과거 청산보다 미래에 대한 도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 이에 대한 준비 방안과 세부 정책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20년 집권도 가능할 것입니다.
- 과거 청산에 집중하면 상대 정당의 잘못과 반사이익에 기대게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장기집권이 어려워지고, 집권 주기가 짧아집니다.

현재의 탄핵 국면 때문에 각 정당이 국가적 도전 과제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 세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 이번 탄핵 이후 다음에 집권하는 세력이 또다시 적폐 청산에 골몰하여 과거에 머무른다면, 지난 촛불 탄핵 이후의 상황이 재연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❻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부터 해결

현재 국민들이 민주당에 보내는 지지는 정당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반사이익에 의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질문과 답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설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공수처 설치, 검수완박 등의 정치권 이슈는 국민들에게 철처하게 외면받게 됩니다. 촛불 혁명 이후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민주적 사회 통합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김호기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1. 질문의 맥락

민주당은 국가적 도전 과제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❶ 사회학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두 국민 국가'

현재 우리나라는 보수의 대한민국과 진보의 대한민국, 달리 표현하면 '국민의힘'의 대한민국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 현대 사회에서 이익과 가치가 다원화되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갈등이 없는 사회가 더 문제적인 사회입니다.
- 갈등의 유무보다는, 갈등이 과도할 경우 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갈등 비용이 매우 높은 국가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념 갈등이 가장 심각합니다.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❷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에서 주목한 민주주의 위기의 다섯 신호

❶ 상대 정치 세력의 부정과 악마화
❷ '이중 잣대(내로남불)'에 따른 민주주의 게임 규칙의 훼손
❸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❹ 시민사회의 지나친 이념 대결 구도
❺ 인기 영합적 국수주의

상대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과 악마화는 결국 정치 양극화를 초래하고, 이중 잣대에 따른 민주주의 게임 규칙의 훼손은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약화시킵니다.

❸ 정서적 양극화의 심화

정치 양극화가 정서적 양극화로 악화되어 이념이 다른 사람하고는 소통이 단절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응답자의 58.2%는 정치 성향이 다른 이와 연애 및 결혼을 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 또한 응답자의 33.0%는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지인과의 술자리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71.4%는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함께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2. 해결 방안

민주주의는 제도와 문화가 함께 가는 시스템입니다. 민주적 사회 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중기적으로 제도적 해법을, 중·장기적으로 문화적 처방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❶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제도적 해법으로서의 개헌 필요

'87년 체제'를 지탱해 온 1987년 헌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 1987년 헌법의 빛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라면, 그늘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 할 것입니다.
- 헌법 개정의 핵심은 권력 구조 개편에 있습니다. 승자 독식 구조를 만드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경우 내각제를 국민들이 과연 수용할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 아울러 개정 헌법에는 기본권, 기후·환경 등 21세기적인 새로운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 결국 이는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시간상 이번 대선 과정에서 헌법 개정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개헌을 준비하여 2026년 지방 선거 시기에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❷ 공존, 대화, 타협의 문화적 처방 필요

문화적 처방의 경우, 공론장 마련과 시민교육이 중요합니다.

- 공론장의 다른 이름은 언론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를 지지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사회 통합과 관련해서는 사회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지 '조장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민주 시민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생각이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관용을 내면화시킨다면,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사회 전반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도전적 시행착오가 가득한 혁신 국가, 'Scale-up Korea'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정동 교수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1. 질문의 맥락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아무도 가 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인데, 우리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❶ 추격자 전략의 한계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모범이 없는 길', '정답지가 없는 길', '교과서에 없는 길'입니다.

- 우리나라는 그간 선진국에서 정립한 비즈니스 모델, 선진국이 이미 길을 보여 준 선진 기술, 지배적 디자인을 선보인 탁월한 제품 등을 빨리 벤치마킹하여 고성능의 제품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누구도 미래를 알지 못하는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벤치마킹 대상을 찾는 루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추격에 힘썼던 과거의 기억은 뒤로하고 이제 아무도 가 보지 않은 미지의 길로 나가는 도전적 루틴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우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❷ 기술 및 산업 표준 주도권 문제

특히 현대적인 의미에서, 기술의 세계·산업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표준'입니다.

- 기술 표준이 한 번 만들어지면 그 표준을 따르지 않고는 물건을 만들 수 없고 만들어도 소용이 없으므로, 표준을 장악한 자가 곧 비즈니스의 질서를 장악하는 자이며 산업의 지형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오래도록 산업 경험을 쌓아 왔던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은 과거 세계의 비즈니스 질서를 결정했던 기술 표준의 종주국들이었습니다.
- 최근 중국에서 개발된 딥시크(DeepSeek) 모델의 등장을 보면서 깨닫게 된 점 중 하나는 중국이 기술 표준의 설정이라는 모범을 선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전기차 모델, 고속철도 모델, 배터리 모델 등에서 새로운 중국발 기술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중국은 자체적인 개념 설계를 통해 사실상 세계의 벤치마크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중국이 기술 표준을 제시하는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그간 선진국의 표준이 교과서라 생각하며 열심히 따라 왔는데, 다른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외부에서 이 교과서 저 교과서를 수입하면서 이를 따르려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단계에 직면했다 할 것입니다

❸ 우리만의 고유한 개념 설계 필요

새로운 개념 설계를 위한 비법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남들이 도전하지 않은 문제(최초의 질문, 담대한 비전 등)를 풀어 보자고 나서는 것이고, 둘째는 조금씩 시행착오를 쌓아 가면서 비전을 개선해 나가는 것, 즉 스케일 업(scale-up)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 과거와 같이 벤치마킹을 통해 표준을 만든 이들의 꿈을 좇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루고 싶은 꿈을 찾아 우리만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 새로운 비전은 누구도 던지지 않은 질문에 해당해 정답이 없으므로, 조금씩 시행착오를 거치며 버전을 개선해 나가는 스케일 업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다시 말해 우리만의 고유한 개념을 설계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제시할 만한 기

술을 만들어 내는 방법은 최초의 질문을 던지고 스케일 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❹ 제조업 기반 활용 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 왔던 일, 즉 제조업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 그간 우리는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인적자원을 쌓아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 역량은 전 세계 5위 수준이며, 반도체부터 해양 플랜트, 우주 발사체에 이르는 풀 패키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 현재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제조업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산업 현장에서 제조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혁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하나의 업계에서 혁신을 이루려면 우선 제조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고 실현 가능 여부를 살펴 피드백 앤 포워드(feedback & forward) 과정을 거치는 제조 루프(loop)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이미 제조업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몇 개 국가(미국·중국·일본·한국)만 가지고 있는 역량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업계가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고,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재원을 투자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제조업은 모든 혁신의 모판입니다. 제조 기반 위에 고급 디자인·마케팅·브랜딩을 얹어야 고부가 서비스업이 가능하고, 결국 독창적인 개념 설계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해결 방안

금융 혁신, 인내 자본(patient capital) 확대, 평생학습 체계 구축, 패스트 러닝(fast learning) 문화 정착, 국회의 역할 수행이 혁신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❶ 금융 혁신 우리나라 금융은 은행의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보수적 수익 모델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권을 모두 살펴봐도 이와 같은 수익 모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금융이 산업의 도전과 확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 분야를 혁신적인 구조로 개혁해야 합니다.

- 금융은 산업의 그림자이며, 둘 중 하나가 없이는 다른 하나가 설 수 없습니다. 산업과 금융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 대항해시대 당시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과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 콜럼버스의 항해를 지원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은 위험과 책임을 분산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창조적 파괴를 지원하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금융의 본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금융은 산업계가 최초의 질문을 던지고 스케일 업을 해 나갈 때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위험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은 가만히 앉아서 예대마진을 통해 기록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한편, 산업계의 발전에는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혁신을 해야 합니다.

❷ 인내 자본 확대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개념 설계의 양은 그 국가가 보유한 인내 자본의 양과 정확히 비례합니다.

- 기관 투자 또는 정부 R&D 자금, 정부 산업 지원 자금, 벤처 지원 모태 펀드 등을 통틀어 인내 자본이라고 합니다.
- 미국의 벤처 펀드는 1개 벤처의 성공을 위해 100개 벤처를 뒷받침하는 투자를 진행하며, 성공한 1개 벤처를 통해 실패한 99개 벤처에 대한 투자비를 커버합니다.
- 우리나라의 인내 자본은 상당히 취약해진 상태로, 각자도생의 시대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 정부 투자는 중요한 인내 자본 중 하나로, 기업과 대학에 대한 R&D 투자 등 국가적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입니다.
- 국가의 R&D 예산이 갑작스럽게 삭감되는 일은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내 자본을 확대함으로써 각 R&D 분야가 시행착오를 쌓아 가면서 스케일 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❸ 평생학습 체계 구축 결국 혁신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학을 졸업하는 23세부터 80세에 이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 즉 'Learning Korean'을 구축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에는 매년 70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지만, 성인 교육에 투입되는 재정은 고용보험 연계 환급금과 일부 재정 사업비를 포함해 연간 3~4조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 기술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성인들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교수 활동보다는 학습 활동을 중심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 50대 후반에 이른 베이비부머가 1년에 100만 명씩 노동인구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들에게 학습의 기회라는 최고의 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대학은 평생학습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 정부가 이들에게 질문을 던질 기회를 다시 제공하고 작게나마 스케일 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한다면, 우리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산업별·지역별·레벨별 맞춤형 학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반도체·건설·화학·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개인의 능력을 높이거나, 다른 분야와 융합하거나, 다른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국가로 다양한 산업에 수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대규모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는 주어지지 않은 특별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평생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적인 평생학습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❹ 패스트 러닝 문화 정착 중요한 건 빠른 실패(fast fail)가 아니라 빠른 학습(fast learning)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짧은 주기로 시도를 거듭하여 배움을 극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 6개월, 또는 분위 단위로 한 버전의 일 또는 도전을 무조건 끝내고 결과를 봐야 합니다. 결과를 놓고 성공과 실패를 묻기보다는 해당 도전을 통해 최대한 배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혁신 사례는 패스트 러닝의 산물입니다. 로드맵을 앞선 최초의 혁신 사례로 기록된 64메가 D램 개발은 198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0년 만인 1994년에 성공한 것인데, 매주 수요일 아침 7시에 삼성전자 전 부서가 모여 '수요 공정 회의'라는 학습을 거친 결과물이었습니다. 패스트 러닝을 통한 이 메커니즘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 결국 혁신은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를 통한 학습이 누적된 결과이자, 완성을 향해 지속적으로 스케일 업을 거친 결과입니다.

❺ 국회의 역할 수행 신기술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사회에 안착시키며, 기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네트워크 속에서 각 주체들이 잘 어울리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 국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 신기술에 옷을 입혀 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의 모든 신기술은 야수와 같아서 어디에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의회가 법과 제도를 통해 반드시 맞춤형 옷을 만들어 입혀야 합니다.
- 법과 제도를 만들 때는 그러한 규범이 기술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국회는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 알아야 하며, 기술과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 역시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 또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버전을 개선하는 스케일 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선진국의 함정에 빠진 한국, 살아날 길은 무엇일까요?

권석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반도체융합공학과
미래에너지공학과

1. 질문의 맥락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데, 이 함정에서 어떤 식으로 빠져나와야 할까요?

❶ 선진국의 함정

선진국의 함정에 빠진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나라가 우리보다 10~20년 정도 먼저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 다만 학계나 미디어에서 아직 선진국의 함정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고, 이 함정에 빠졌는지 여부는 부분적인 조짐과 징후를 통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각 나라가 빠진 선진국의 함정이 무엇인지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❷【선진국의 함정 1】 산업 경쟁력 약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반이 되었던 중화학 공업과 제조업 등의 전통적인 산업, 그리고 첨단 산업과 지식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❸【선진국의 함정 2】 극심한 저출산

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규모의 경제와 내수 시장이 축소된다는 점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 창출의 기회도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혁신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❹【선진국의 함정 3】 양극화 심화

시간이 갈수록 세대, 종교, 사회단체, 지역 간 갈등과 분극화가 심화되어, 양극화를 넘어 다극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회 분리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0여 년 동안 자리 잡아 왔던 민주주의 체제와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AI를 활용한 혁신과 신산업 개척,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처치와 장기적 대응, 세대 간 갈등 해결과 시민사회 성숙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선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❶ AI를 활용한 혁신과 신산업 개척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들은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제조업, 중화학 공업, 조선업, 방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잡았거나 이미 추월했습니다.
-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는 동안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 중심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의 핵심인 제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경우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두 차례의 혁신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1990~2000년대의 인터넷 혁신과 2010년대의 모바일 혁신이 그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혁신인 AI 혁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민간 분야는 물론 공공 분야(정부 부처 등)에서도 30~50년 이상의 업력, 방대한 데이터,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석유 화학 분야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현재 중국에 밀리고 있고 향후 사양 산업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간 쌓아 온 데이터와 노하우를 결합한 AI 기반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공정을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 조선업 역시 AI가 첨단 기술 도입 가속화 및 모듈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기존 조선업이 상선 및 벌크선 중심이었다면, 미래의 조선업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산업과 결합해 해군력 강화책의 일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이후의 미국은 해군력 보존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우리나라의 조선업계를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여길 것입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 제조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 제2의 조선업 르네상스 파도에 잘 올라탈 필요가 있습니다.
- 자동차, 섬유, 화학, 기계, 로봇 산업은 각 영역 자체는 물론 산업 간 연계 과정에서도 많은 혁신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AI를 통해 각 분야가 한 번 더 점프할 만한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첨단 바이오산업은 AI가 가장 큰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신약, 맞춤형 치료제, 백신, 의료 기기 등의 개발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AI가 강력한 혁신의 엔진으로 해당 업계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데,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잘해 왔던 분야뿐 아니라 앞으로 훨씬 더 잘해야 하는 분야의 산업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 이미 좋은 성과를 거둔 반도체 산업에 더 큰 투자를 하여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AI 기반 최적화 설계를 활용해 GPU를 포함하는 시스템 반도체 또는 로직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SoC(system on chip) 형태로 각종 기기에 내장될 수 있는 경량화된 맞춤형 AI 반도체는 신산업 전환 전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AI와 반도체 산업 간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 IT 혁명, 모바일 혁명, AI 혁명에 이어 앞으로 한 세대 안에 양자 IT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양자 컴퓨팅 분야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양자 IT 기술은 금융, 법률, 공공시설, 통신, 전력망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한 핵심 인프라 시스템과 직결되므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❷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처치와 장기적 대응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문제는 단순한 출생률 저하 이상의 문제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2010년대에 출생한 세대가 대학생이 되고 사회로 진출하는 2030년대 초반 이후가 되면 저출산의 영향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 인구 감소는 국내 경제 규모의 축소뿐 아니라 인적 다양성과 혁신 인재 배출 가능성의 감소라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외 인재 유입 확대를 통한 긴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 첨단 기술업, 전략 산업 등에 종사할 외국인 인재에게 보다 개방적인 비자 및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온 유학생 및 전문 인력이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국내 대학들이 동남아, 서남아, 동유럽 등지에 클러스터 개념의 캠퍼스를 설치한다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 고학년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본교로 유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내 산업 및 연구 분야에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국가 안보와 관련한 분야의 경우 철저한 신원 검증을 거쳐야겠지만, 당장 인력이 부족한 첨단 산업 및 필수 산업 분야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인재를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전략 산업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를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적 대응 방안으로는, 기존의 바우처 및 지원금 방식에서 벗어나 출생한 아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최소 18~19년간 국가에서 성장과 교육을 책임지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국가 책임제'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의 파격적인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대전제 아래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혁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 이 정도의 파격적인 전환 없이는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❸ 세대 간 갈등 해결과 시민사회 성숙을 위한 정책 추진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분위기 형성 및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최근 들어 세대, 성별,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 현상, 독일의 극우 정당 AfD의 부상, 영국의 반이민주의, 프랑스 내 특정 종교인 이민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는 선진국 전반에서 나타내는 현상으로, 선진국의 함정에 해당합니다.

강력한 공권력으로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 시민사회의 활동, 시민의 자율권 행사, 시민의 의사 표현과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이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현행법을 무시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단체 및 유튜브 채널, 검증되지 않은 미디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사회적 갈등의 불씨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통제하고,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 청년 세대는 역사 교육을 통해 앞 세대의 경험과 고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 또한 시대 변화에 맞춰 재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민주 시민의 소양을 갖춘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 현재의 공교육 과정에서는 금융 교육, 법과 정치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입법, 사법, 행정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입시를 위한 커리큘럼을 축소하는 대신 법과 시민사회의 역할, IT 및 AI 관련 소양,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양성하는 방향으로 공교육 커리큘럼을 혁신해야 합니다.

지난 62년의 변화와 비교해 볼 때, 향후 5년 후의 변화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홍성국 최고의원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1. 질문의 맥락

우리 사회는 혁신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의 탓인가요?

❶ 외부 충격 없이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곤두박질

선진국을 넘어 선망 국가,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성장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를 놓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정책으로 만들어 과감하게 실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❷ 혁신 성장은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

혁신 성장을 해야 분배가 가능하고, 분배를 한다는 것은 포용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 진보 진영에서는 다양한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를 늘리자는 포용 성장을 주장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 혁신 성장과 포용 성장의 선순환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 ‘왜 성장을 하는가?’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분배를 하는가?’ 분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기초적인 대화마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❸ 거시적으로 우리나라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

성장률이 정체되는 상황 속에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는 진영 간 ‘네 탓 공방’으로 실기하고 있습니다.

- 2025년의 우리나라는 진영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갈등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서로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몰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경제개발을 통해 지난 62년간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현재는 내부의 갈등에 골몰해 방향성을 잃은 상태에 놓였습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 정치·행정·언론·민간까지 사회의 모든 주체가 지금의 우리 모습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잘 살 수 있도록 거시적 관점의 정책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혁신 성장을 위해 사회 전체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AI를 비롯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제조업의 혁신, 한류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❶ AI를 비롯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

AI, 반도체, 2차전지, 미래 차, 로봇 등의 미래성장동력은 혁신 성장의 가늠자입니다.

- 한 가지만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의 만능 처방은 없으므로, 거국적인 차원의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 적극적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조정,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이 함께 필요합니다.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벤처 투자 선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 미래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는 AI를 비롯한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기업은 생산·마케팅 등 모든 공정에 AI 등의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 주요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❷ 제조업의 혁신 필요

국내 제조업이 AI와의 결합을 통해 재도약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임에도 다른 나라와의 경쟁,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본에서 소재 부품을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생산하고, 그 중간재로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구조가 깨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9년간 제조업 분야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 우리는 현재 변화(change)가 아닌 전환(transition)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 속도가 거의 무한대로 빠르기 때문에, 제조업에 AI를 결합하여 제조업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❸ 한류의 활성화 필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한류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 어디에든 앞에 K를 붙이면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지만, 미래에 대한 설계가 없는 주먹구구식 한류 사업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지만, 이를 짜임새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 학과, 맞춤형 교육제도가 부재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무역진흥공사와 같은 형태로 한류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류의 활성화를 통해 K-AI와 K-제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전략에 기반한 혁신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한류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해외로 확산되는 경우 제조업 수출이 증가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반한 자신감으로 북한의 안보 딜레마까지 고려해 주는 상호 경제·안보 협력을 한다면 어느 순간 통일도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세종연구소

1. 질문의 맥락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정말 확실한 수단일까요?

❶ 북한의 핵 개발과 고도화

과거와 달리 현재 북한은 체제 안보를 위해 전쟁 초기에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며 우리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면서까지 핵전력을 고도화하였습니다.
- 아울러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 세계 5위 국가인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전쟁 초기에 북한 병사들이 대규모 살상될 것으로 판단하여,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 초기부터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미국의 핵우산만으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❷ 휴전협정 체결 후 70년이 지났음에도 평화협정조차 체결하지 못한 상황

우리나라와 북한은 잠시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며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 열강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북핵 문제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한반도 평화 구축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현재는 풀리지 않는 난관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2. 해결 방안

남북한 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 공존을 위한 실질적인 상호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독일의 사례와 같이 통일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❶ 남북한 간 평화 공존에 대한 신뢰 회복이 북핵 문제 해결의 시작

북핵 문제 해결에는 핵 폐기에 대한 기술적 합의와 실행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호 간의 신뢰 관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 남한과 미국이 북한과 활발한 경제협력을 하며 대북 공격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가 평화 공존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북한이 자각하게 해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독일이 과거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있던 시절 국회의 인준까지 받아 서로를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다가 동독이 내부 문제로 체제 붕괴를 맞이해 결국 통일 독일을 이루게 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남북한의 상호 신뢰와 평화 공존, 두 국가 체제에 대한 인정이 통일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는 통일 독일의 사례를 볼 때 너무 지나친 걱정이라 할 것입니다.
-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유지하면서 상호 존중에 입각한 우호적인 두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정책입니다.

❷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상회담까지 서두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우리 정부는 북미 간 정상회담을 흔쾌히 동의하는 대신 주한미군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북미 간 합의 내용에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야 할 것입니다.

- 1기 트럼프 정부 당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2기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한이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 간 대화가 전혀 없는 상황이 이어져 왔기에 새로운 북미 정상회담에 남한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 아울러 핵 능력을 고도화한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상태여서 UN 안보리에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을 묵인해 줄 용의가 있다는 식의 인센티브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❸ 남북한 평화 공존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필요

남북한 간 경제력 차이가 50배 이상 나는 상황에서 통일을 얘기하면 북한은 흡수 통일 제안으로 인식하여 반감을 크게 갖습니다. 남북한 간의 호혜적인 경협을 통해 평화 공존을 지속한다면 우리도 통일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호적인 두 국가론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 우선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 북한의 수락 의사와 상관없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평화 공존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 더 나아가 남북한 연락 채널을 복구하여 대화를 재개하고, 정부 간 교류를 민간의 교류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 재래식 군사력 세계 35위인 북한은 세계 5위인 남한과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니 핵무기 개발로 군사적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므로, 북한을 안심시킬 수 있는 새로운 남북미 군사 합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남북한 갈등이 대한민국에 유익합니까?

김형덕 소장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탈북민

1. 질문의 맥락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남북한 갈등을 우리가 나서서 조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❶ 모든 갈등은 일방적이 아닌 양자적 책임의 문제

이미 갈등이 발생했다면 사회는 이를 완화하는 방향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북한 갈등의 경우 선택의 열쇠는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남한이 쥐고 있으며, 이 갈등이 완화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한에 유익한 일이 됩니다.

- 북한은 일부 국가하고만 교류하는 반면 남한은 전 세계에 문호를 개방해 교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갈등 시 남한이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갈등이 생겨나지 않도록 남한이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휴전선 인근의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하고 북한을 향한 공세적인 확성기 방송을 지속할 경우 남북한 정세 긴장, 남한의 물적 피해, 남한 내부 갈등 증폭이라는 결과가 돌아올 뿐입니다.

❷ 남북한 갈등 관리 필요

우리는 남북한 갈등이 남한은 물론 주변 관련국들인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더라도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체제 안정을 이유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현실성이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 먼저 북핵 폐기에 관한 국제 사회의 견해를 살펴야 하고 이해관계가 깊이 얽힌 나라들이 앞장서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세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❸ 남북한 간 교류, 평화, 공존 노력이 지속되어야 그 과정에서 통일 가능

통일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되지 않을 일도 아닙니다.

-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이 남한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남한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막고 있으나, 북한 주민들은 이미 남한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남북한 사이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결국 상호 이해가 깊어져 갈등이 줄어들고, 평화와 공존이 일상화되어 남북한 국민에 의한 통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남북한 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는 단번에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므로 서두르지 말고 긴 안목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❶ 남북한 갈등의 원인 최소화 필요

북한을 향한 적대적인 메시지와 적대적인 행위를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긴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아닌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특히 확성기 방송은 휴전선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남한 국민들에게 극심한 소음 피해를 입히고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DMZ 내의 동식물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반자연적인 행위입니다.
-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는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점진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❷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부합하도록 대응 필요

미국은 우리와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이지만, 미국 정부는 언제든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특성은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남한을 제쳐 두고 북한과 직접적으로 교류·협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트럼프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상황이 크게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는 전략은 현실성이 없는 대응입니다.

❸ 일관성 있는 대북 우호적 메시지 필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일관성 있게 우호적인 대북 메시지를 보낸다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담은 적대적인 메시지는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국민의 기대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북 유화 정책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국가와 국민에게 객관적인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을 거쳐 대북 정책을 마련하되, 이를 서두르지 말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담은 적대적인 메시지는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❹ 남북한 간 교류 회복 필요

남북한 간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관계 개선도, 한반도 평화 실현도, 종국적으로는 통일도 이룰 수 없으므로 경제적 교류를 빠르게 회복하고 점진적인 인적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내전 등으로 일시적 분단 상태인 키프로스와 예멘의 경우 서로 사람이 왕래하는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또한 정치적인 갈등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적·경제적 교류를 합니다.
- 남북한 간 교류를 진행하는 데 있어 남한은 선제적이고도 독자적인 진행으로 국제사회의 대응에 영향을 주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독자적으로 가능한 일일지라도 진행 시기를 늦춰 국제 사회와 연대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해야 합니다.

대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은 포기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인생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방현석 교수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소설 「범도」 작가

1. 질문의 맥락

역사교육은 단편적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시대정신을 중심으로 한 논증적·서사적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❶ 역사의식의 중요성

역사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나 민족이 기억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겪어 온 수난의 시간과 영광의 순간에 대한 공동의 기억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바탕입니다. 그 기억에서 비롯되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같은 민족, 같은 국민이라는 동질성을 부여합니다. 각국의 국민은 인류가 지닌 보편적인 가치와 더불어 각자 고유한 가치체계와 행동 양식을 따릅니다. 그 나라 국민의 절대다수가 존중하는 대상이 있고, 결코 용인하지 않는 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법규나 제도적 강제에 앞서는, 보이지 않는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합의의 바탕이 바로 나라의 역사에 대한 공동의 기억입니다. 3.1절, 광복절, 5.18과 같은 국가기념일은 그러한 공동의 기억을 특별히 제도화한 것이고, 국민들이 하루하루 조화롭게 살아가는 일상을 만드는 가치와 행동 규범은 모두 공동체가 축적해 온 기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는 과정인 역사교육은 국민 전체의 공동 가치를 형성하고, 행동의 규범을 세우고, 더불어 지향해야 할 미래로 함께 나아가게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유관순과 안중근은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가 존중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국민들이 "유관순은 이상한 사람이고,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국민이 독재자들의 권력욕을 앞세운 총칼 앞에 당당히 맞서 싸워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투쟁이었다."라는 공동의 기억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국민들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❷ 역사의식 결여와 총체적 위기

역사의식은 사회적 합의의 전제이므로, 역사의식이 없다는 것은 그 어떤 사회적 합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역사의식이 없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분노해야 할 대상에 분노하지 않고 존중해야 할 대상을 혐오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현재 우리 사회는 역사의식의 결여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❸ 암기식 역사교육은 역사의식 바로 세우기의 가장 큰 걸림돌

'무엇이 우리 민족에게 바른길이었나?'라는 질문을 둘러싼 큰 맥락 속에서 역사를 봐야 합니다.

- 안중근 참모중장이 총을 쏴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그 순간의 행위만을 봐서는 안 되며, 그 행위 앞의 사건과 뒤의 결과를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 3.1운동이 왜 일어났는지를 역사적 맥락에서 보지 않으면 이 운동은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불법 시위나 위법 행위가 됩니다.

암기식 역사 교육은 역사 왜곡을 초래합니다.

- 순간적이고 파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역사교육을 하면 왜곡이 가능해집니다.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암기식 역사교육은 맥락을 이해하게 하기보다는 파편적인 지식을 통해 점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역사 왜곡에 취약한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대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은 포기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인생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❶ 암기식 역사교육에서 논증적·서사적 역사교육 시스템으로 전환

역사교육만큼은 단편적인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시대정신을 공부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독립 항쟁 방법으로서 가장 유효했던 방법들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 역사학계가 떠받드는 실증주의(몇몇 통계자료와 파편적인 증거 중심)로 역사를 왜곡하여 우리 역사를 끊임없이 왜소화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전체 맥락과 시대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논증적·서사적 역사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으로 인물과 사건을 이해하고, 맥락 속에서 시대정신을 배우며,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후속 과제를 남겼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교육으로 획기적·전면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❷ 친일 식민사관 청산과 역사 교과서 개혁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와 그 계승자들의 식민사관에 따른 서술 방식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이 지녔던 시대정신을 중심으로 역사 교과서를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 친일파 학자들과 그의 제자들이 사용한 '일제시대'라는 용어를 '일제강점기'로 고쳤지만, 이는 여전히 일제 관점의 시대 규정입니다. 우리 민족의 관점으로 보면 해당 시기는 민족 독립이 절대적인 시대정신이었던 '항일 독립전쟁기'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아직 이 용어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 우리 역사교육의 현실입니다.
- 우리 민족의 입장과 시대적 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한 번만 살펴본다면 일본 중심의 관점인 '식민지 시기'가 아닌 '항일 독립투쟁 시기'로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기억해야 할 공동의 기억은 식민 통치가 아니라 '항일 독립투쟁'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치열하게 분투했던 사람들의 자취입니다.
- '독립운동'이 아니라 '독립전쟁'이고, '안중근 의사'가 아니라 '안중근 참모중장'이며, 항일 독립 항쟁 시기의 핵심은 '항일 무장투쟁'과 '독립전쟁'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 해방 후 친일파들이 주도한 역사교육의 틀을 완전히 버리고, 파편적인 실증주의 역사학이 아닌 민족과 시대정신을 고려한 서사적 역사학을 바탕으로 역사 교과서 내용을 개편해야 합니다.

❸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와 우리의 의무

대한민국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스스로 희생하신 분들의 헌신으로 이어져 온 나라이므로, 그분들의 인생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안중근 참모중장은 그 시대에 혼자 성공하려고 했다면 누구보다 성공할 수 있었으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홍범도 장군은 나라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자기 인생을 고스란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 그분들은 자기 인생을 포기했지만, 우리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 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총을 들고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도, 투표만 잘하면 내가 원하는 나라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의무는 그분들을 역사의 승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역사가 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❹ 역사의식 바로잡기로 창의적 인재 양성

역사교육과 역사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공동체의 합의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국가의 역사의식이 바로잡혀야 그 안에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당당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은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산물의 가장 큰 수원지는 역사이며 역사적 상상력과 창의력은 다시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 지나간 긴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당시 선조들은 어떤 선택을 통해 어려움을 돌파했는지,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재앙에 직면했는지, 어떤 훌륭한 선택으로 이 나라를 바꾸었는지 등을 배움으로써 역사적 상상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창의적인 인재가 되어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❺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

역사 기념일 변경: 국군의 날- 10월 1일 → 6월 7일, 또는 9월 17일

- 현재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것은 과거 육군의 날(10월 2일), 해군의 날(11월 11일), 공군의 날(10월 1일)을 하나로 통합한 결과입니다.
- 새로운 국군의 날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수행한 첫 번째 전투인 봉오동전투(1920년) 승전일인 6월 7일, 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한 한국광복군(1941년) 창건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여 우리 군의 정통성이 봉오동전투와 한국광복군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신흥무관학교의 역사 계승

- 우리나라의 간성을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의 기원은 항일 독립전쟁 시기 만주에서 창설한 독립군 간부 사관학교인 신흥무관학교에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신흥무관학교를 계승한 육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은 군인이 국민을 위한 존재임을 철저히 인식하여 군을 사적 권력의 수단으로 동원하는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도록 사명과 자부심을 확립해야 합니다.

독립전쟁기념공원 조성

- 서울 또는 수도권에 독립전쟁기념공원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길고 치열했던 40여 년에 걸친 독립전쟁의 역사를 일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 등 독립전쟁의 영웅들을 기념해야 합니다.

역사 현장 교육 강화 프로그램

- 근현대사 교과를 타 역사 교과와 분리하거나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파편적인 암기식 역사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 대상의 국내외 역사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상설화해야 합니다.
- 역사 현장 체험 교육을 별도의 교과목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 국어, 문학 등 비역사 교과에 역사 관련 콘텐츠를 수록하도록 합니다.

우리 역사의 K-콘텐츠화 지원사업

- 식민 지배에 맞서 싸운 유장한 항일 독립전쟁 서사, 민주화와 산업화에 모두 성공한 K-역사 자체를 드라마, 영화 등의 세계적인 콘텐츠로 만들도록 지원함으로써 K-콘텐츠의 기반을 더욱 강화·확대해야 합니다.
- K-역사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K-영화와 K-드라마를 비롯한 K-문화에 재도약 발판을 제공해야 합니다.
- K-역사 콘텐츠로 우리나라 산업계의 K-브랜드 이미지 가치를 높이고, K-디스카운트를 극복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K-역사 문화 축제

- K-역사 문화 축제를 열어 우리 역사와 문화의 위상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하고, K-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을 대대적으로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동시에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정상화하고, 친일 반역자 문제와 뉴라이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1. 질문의 맥락

한반도 평화가 지정학적 영향 속에서 일본 극우 세력과 뉴라이트의 개입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❶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평화 문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중국·러시아의 대륙 세력과 미국·일본의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 이는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국제적인 긴장과 갈등의 중심이 되어 온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환경입니다.
-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은 현재까지도 남북 분단과 한반도 평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할 때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오래된 숙제이자 앞으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 외세에 대응하는 의미에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평화, 아울러 내부적으로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평화까지 모두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❷ 일본 극우 세력과 국내 뉴라이트(이하 '뉴라이트')의 관계

일본에서 시작된 혐한과 혐중이 일본 극우 세력의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뉴라이트를 통해 전파되어, 국내에서도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혐중과 국가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본은 대륙 세력인 중국·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의 우파를 포섭함으로써 미국·일본·한국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과 일본 간 역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뉴라이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 1993년 위안부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한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에 반대한 일본 자민당 내 극우 세력이 '위안부와 강제노역은 없었고,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었으며, 그 논리가 뉴라이트의 핵심이 된 것이지 우리나라 안에서 뉴라이트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❸ 뉴라이트의 반역적인 행위

2002년 일본 극우 세력은 뉴라이트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좌파에 있다가 우파가 된 사람들, 다시 말해 진보 진영을 잘 아는 사람들을 포섭함으로써 제2의 노무현 정권이 더 이상 한국에 들어서지 않도록 대응해 나갔습니다.

- 일본은 뉴라이트를 통해 2007년에는 대선 후보 이명박을 지원했고, 2010년대에 뉴라이트 세력이 연합을 이룬 후에는 대통령이 된 이명박이 뉴라이트를 지원하였습니다.
- 이후 뉴라이트는 박근혜 정부 때 친일 국정 교과서 편찬 등에 관여하였으나 박근혜 탄핵으로 실패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정권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가함과 동시에 '문재인은 중국의 스파이다' 등의 거짓 정보를 생산하여 대규모로 유통시켰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져 일본 극우 세력으로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뉴라이트는 '완전한 뉴라이트 인사'로 알려진 사람들을 주요 기관장으로 임명하도록 유도했고 이는 결국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도 뉴라이트와 한일 극우 세력은 혐중 정서를 퍼트리고, 위헌·위법을 저지른 것이 자명한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며 대한민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반역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정보기관 개혁과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등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확립하고, 한일 관계를 정상적인 협력 관계로 개선함과 동시에 여러 국가와의 다자간 균형 외교를 복원해야 합니다.

❶ 다수의 독립된 정보기관 간 견제 체계 구축

차기 정부에서는 여러 개의 정보기관을 두고 각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보 권력의 독점을 막아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선진국은 여러 개의 정보기관을 두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CIA, FBI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정보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정보기관인 국정원 외에도 몇 개의 정보기관이 더 있으나, 해당 기관의 예산을 국정원이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번에 발생한 것과 같은 위헌적이고 불법한 계엄과 내란 상황 등의 반역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예산까지도 완전히 독립된 다양한 정보기관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정보기관의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등 정보기관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❷ 역사 왜곡 및 뉴라이트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친일·반역적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뉴라이트 세력의 역사 왜곡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친나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했으며, 독일은 나치 찬양 및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친일 행적을 정리하는 작업(「친일인명사전」 편찬 등)을 시도했으나, 이를 근거로 친일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 국회에서 그간 수차례 관련 처벌법이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 우리나라가 친일 행위나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일본 역시 영향을 받아 독일의 사례와 같이 관련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친일·반역자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위헌적이고 불법한 계엄과 내란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이러한 배경 때문에 대학교수와 고위 관료들이 '위안부와 강제노역은 없었고,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 독일의 경우 나치를 찬양하는 발언을 하면 현직 총리라도 즉각 사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사 왜곡적, 반역적인 언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❸ 한일 관계 개선과 다자간 균형 외교 추진

한일 양국의 정상끼리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실무급 협상을 통해서는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감정적 대응을 최소화하면서 역사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 일본 이시바 총리의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 동맹 중심이지만 총리 본인이 친중국·친북한파 인사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식민 지배를 했다는 것에 대해 계속 사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본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총리의 기반이 약해, 당내 극우파들은 이시바 총리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 차기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일 굴욕외교를 청산하되 일본과 정상적인 협력 관계로 개선함과 동시에 여러 국가와의 다자간 균형 외교를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절벽으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통한 스마트 정예강군 건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아닐까요?

이용민 연구위원
민주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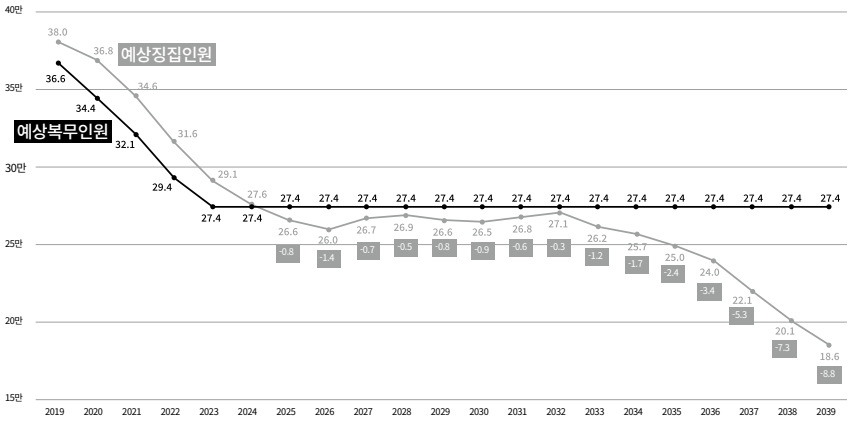
1. 질문의 맥락

한국군은 인구절벽, 전투 숙련, 첨단 전력, 개혁 완성, 경제 이익의 총 5가지 차원에서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통한 스마트 정예강군 건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❶ 인구절벽

초저출생 인구 위기로 현재의 징병 중심 군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전투 전문 군인을 중심으로 하는 정예군 구조로 개혁해야 합니다.

당장 올해인 2025년부터 징집병이 부족합니다.(-0.8만) 올해 인구성장률도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입니다.(-0.13%, 통계청) 우리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 민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주요 입영 대상인 만 19~21세 남성은 2019~2023년에 100.4만 명→ 76.8만 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이후 10년간(2030~2040년) 70.8만 명→ 46.5만 명으로 2차 급감(-34.3%)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33년부터 징집병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현재의 50만 군 규모와 군복무 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력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모병제를 통한 정예 강군 건설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❷ 전투 숙련

현재의 징병제 체제에서는 군인들의 전투력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기 복무 정예군대 구성이 합리적입니다.

현행 체제에서 징집된 사병들은 대부분 첨단 장비 운용 등에 대한 전투 숙련도가 상급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전역하고 있습니다.

- 전투 숙련도 상급이란 다음과 같은 훈련 기간을 거친 사병의 숙련 수준을 의미합니다.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KIDA 분석)

미래전 양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동시·통합전, 다차원전, 무인전, 비선형·비대칭전, 도시전, 마비전 등), 병력에 좌우되는 군사 전략은 시대적 대전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미국의 승리로 끝난 이라크전은 미군 18만 대 이라크군 130만의 전쟁이었습니다. 최근의 전쟁은 노동 집약전이 아닌 무기 집약 첨단전입니다.

현재의 징병제가 갖고 있는 강제성도 군대의 질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전투력 하락으로 직결되는 주요 요인입니다.

- 군의 폐쇄성을 타파해 '본인 선택 정예 군인'의 군기(軍氣)를 극대화하고, 병영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병력의 양 중심에서 전력의 질 중심으로, '이기는 군대'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❸ 첨단 전력

AI·혁신 기술 기반의 미래전, 게임체인저 무기에 맞는 스마트 군인 또는 스마트 군대를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초소형 정찰 위성군, 스텔스 전투기, 극초음속 미사일, 개인 전투 체계(워리어플랫폼), 유·무인 복합 전력(드론·로봇), AI 무인 자율 무기 등의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전문 군인 또는 전문 군대가 대폭 확충돼야 합니다.

❹ 개혁 완성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했던 '국방 개혁 2.0'은 업그레이드형 개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완성형 개혁인 '국방 개혁 3.0'을 추진해야 합니다. 단계적 모병제 전환 준비는 그 핵심 요소입니다.

'국방개혁 3.0' 추진을 통해 판을 완전히 바꾸는, '스마트 정예 강군'의 3축 완성에 초점을 둔 획기적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해야 합니다.

- 스마트화: 무기 고도화를 통한 첨단 전력 중심 초연결·초융합·초지능을 구현합니다.
- 정예화: 강군 고도화를 통한 전투 전문 군인 중심 정예 강군을 구현합니다.
- 중심화: 연합 고도화를 통한 한국군 중심 연합 방위 체제를 구현합니다.

'국방 개혁 3.0'은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통한 정예화를 진행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❺ 경제 이익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 및 개인 생애 소득 감소 등의 부작용, 모병제 전환 경제효과 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종의 현물세 개념으로서의 징병제 기회비용을 2015년 경총련은 연간 11.5~15.7조, 2017년 국방대는 10.1조, 2015년 가톨릭관동대 최창현 교수 연구팀은 9.7조, 2015년 KDI 이주호 박사 연구팀은 1인당 0.7~1.13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모병제 전환으로 징집병을 18만 명 감축하면 GDP가 16.5조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고, 2015년 KDI 이주호 박사는 군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면 4.64~9.33조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05년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모병제 전환으로 징집병을 18만 명 감축하면 GDP가 16.5조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고, 2015년 KDI 이주호 박사는 군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면 4.64~9.33조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2017년 국방대 이상목 교수는 군 규모 30만의 정예 강군으로 전환할 경우 병력 운영비 절감으로 일자리가 12만 개 창출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2. 해결 방안

당장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 여건, 군사력 상황, 국민 공감대 문제로 어렵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것처럼 '선택적 모병제'라는 '징모 혼합 확대' 형태의 군구조로 신속하게 개혁하는 동시에,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❶ 선택적 모병제

선택적 모병제의 핵심은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하되, 징집병 15만 명을 감축해, 상비 병력 40만의 정예 강군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병역 대상자는 징집 시 일반 사병(18개월 의무복무)과 기술 집약형 전투 부사관(4년 의무복무) 중 한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징집병 15만 명 축소분은 전투 부사관 5만 명, 군무원 5만 명, 민간 인력 5만 명으로 대체합니다. 즉 상비 병력은 10만 명 감축되지만(현재 50만-징집병 15만+전투 부사관 5만=40만) 국방 인력 전체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군무원 6만 포함 56만-병력 10만+군무원 5만+민간 5만 = 56만)

- 기술 집약형 전투 부사관 +5만 명: 첨단 장비 운용 및 전투 지휘 등에 배치, 급여 외 퇴직 시 사회 정착 지원금(5000만 원) 지급, 여성 부사관 비율 20% 이상
- 군무원 +5만 명: 행정·군수·시설·교육·복지 등 대체(제대 군인 재취업 확대)
- 민간 아웃소싱 +5만 명 : 병원·법원·군사경찰·조리 등 대체

그동안 군이 해 왔던 해안 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이관하고, 부대 간 유사 기능을 통합하며, 시설 경계 등은 용역으로 전환하는 군 구조 혁신을 병행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4.4조로 추산됩니다(전투 부사관(1.8조) 및 군무원(2조) 인건비, 전투 부사관 퇴직금(0.6조)). 징집병 축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0.1~0.3조)을 계상하면 예산은 더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향후 '선택적 모병제 v2.0' 등 단계적 모병제 전환에 대한 재검토 시,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성모병, 재외동포 모병, 전문 용병 모병 등 다양한 '모병 확대' 방식과, 중장기 과제임을 전제로 한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함께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❷ 다양한 모병 확대 방식

여성 군복무는 현재 장교·부사관에 한정돼 있는데, 여성징병 또는 남녀평등복무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군부대 내의 적정 소요에 여성을 모병해 배치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재외동포 모병은 외국국적 동포 중 비접경국 입대적령기 남성동포(약 2만명)를 우선적 대상으로 설정하고, 군 전역 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 등 혜택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전문용병 문제는 프랑스 '외인부대' 사례를 적용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외인부대 : 육군 소속 엘리트부대(1만 규모), 신속대응군 및 특수작전 수행 돌격군

현재의 군복무기간으로도 병력유지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커지게 할 것입니다. '모병제' 정책의 소구력을 높이는 방식으로서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함께 논의하되, 반드시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민군(民軍) 융합의 시대, 이제는 민과 군이 Win-Win하는 거버넌스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형곤 정책연구센터장
한국국방기술학회

1. 질문의 맥락

국가 R&D와 국방 R&D의 이원화로 인해 민군 협력이 제한받아 왔는데, 법적 근거 미비와 거버넌스 부족으로 범국가적 역량이 국방력 강화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❶ 국가 R&D 추진 체계와 국방 R&D 추진 체계 이원화 관성

1970년대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설립되어 국방 R&D를 집중적으로 독점 수행해 왔는데, 국방 R&D는 국가 R&D 사업과 분리된 채 진행되어 왔습니다.

- 1970년대 당시 정부는 매우 협소한 내수 방산 시장 규모와 불안한 안보 여건이라는 제약 속에서 단기간에 방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방산 물자·업체 지정 제도 등으로 일부 업체를 보호·육성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방위 산업은 민간 산업 기반과 분리되었습니다.

❷ 민군 간 기술 협력 촉진 시도

1998년에 산업 경쟁력과 국방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이 제정되었고, 국가 R&D 사업으로서 민군 겸용 기술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이원화된 국가 R&D와 국방 R&D를 연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 최근까지도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의 민수 부처와 국방부, 방사청 등 국방 부처 간 연구 개발 협력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❸ 민군 협력 거버넌스 제한 요인

2000년대 이전과 달리 현재는 혁신적인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민간 연구 개발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국내 제조업 역량과 민간 산업 기반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한 상태입니다. 국방 과학 기술 분야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군 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예를 들어, 과기정통부가 주관하여 설정한 12개 국가 전략 기술 분야는 국방부가 설정한 10대 국방 전략 기술 분야와 유사합니다.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의 국방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1년 방위사업청이 향후 육성 분야로 설정한 5대 국방 첨단 전략 산업 분야(AI·우주·반도체·드론·로봇)는 국방 부처가 전담 육성해야 하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이미 범국가적으로 육성 중인 전략 분야입니다. 민군 간 산업 협력을 활성화하여 국가적인 산업 기반을 국방 산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98년에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2013년에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개정)이 제정되어 민군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으나, 국가 R&D 사업으로 협력의 범위가 민군 겸용 기술을 개발하는 매우 협소한 범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민군 간 산업 협력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민군 간 협력을 다루는 유일한 법률인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은 다수의 국가 R&D 사업 중 하나인 민군 기술 협력 사업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조항 위주로 구성되어, 내용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현행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은 민군 간의 다양한 기술 협력 R&D 및 관련 활동(비R&D 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도록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민군 간 산업 협력이 본격화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2021년 11월에 범국가적인 민군 간 R&D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었기에 구속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흐지부지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민군 간 기술 및 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 전문 연구 센터를 지정하는 등 범국가적 거버넌스와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❶ 민군 기술 협력 사업 효과성 제고

현재 진행 중인 민군 간의 다양한 R&D 협력 활동 등을 더욱 촉진하는 한편, 지금 시행되고 있는 민군 기술 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민군 간 산업 협력이 상시 이루어지도록 거버넌스를 재정립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민군 기술 협력 사업(국가 R&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소한 법률이 아닌, 범국가적인 민군 간 기술 및 산업 협력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수행되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❷ 민군 간 기술 및 산업 협력 총괄 컨트롤 센터

국방 부처와 민수 부처 간의 범국가적인 기술 및 산업 협력 추진 방안 수립, 공동 투자 사업 기획, 추진 중인 민군 간 협력 활동의 애로 사항 해소 및 성과 진단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인 (가칭)'민군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 아울러 대통령실 내에 민군 간 기술 및 산업 협력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비서관급 담당자를 임명합니다.

❸ (가칭) 민군융합법 제정

앞서 제시한 범부처 간 전담 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반영하고, 범국가적인 민군 간 기술 및 산업 협력 등의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전담 법률인 (가칭)민군융합법을 제정합니다.

- 현행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있는 주요 조항은 (가칭)민군융합법 내에 민군 간 기술 협력 R&D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이관·반영합니다.

❹ (가칭) 국방 전문 연구 센터 지정·운영

KIST, ETRI 등 과학 기술 분야 출연연에는 장기간의 기술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 연구 인력 및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를 민군 융합형 핵심·원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점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를 위해 (가칭)국방 전문 연구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합니다. 센터에는 각 과학 기술 분야 출연연별로 주력 분야와 관련한 민군 융합형 기술 개발, 국방 분야 사업화, 관련 인력 양성, 유관 국방 기업지원 임무를 부여합니다.

경제성장률 3%도 쫄리나요?

주형철 본부장
K먹사니즘본부

1. 질문의 맥락

저성장, 무성장, 역성장이 고착화되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5년이 '골든 타임'인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나요?

❶ 저성장 고착화 및 경제 특이점 도달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의 고착화입니다. 반등이 어려운 티핑포인트(tipping-point)에 도달한 것입니다.

- 골드만삭스는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이 15세가 되는 2040년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0%가 될 것이고, 이후로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점점 줄어들어 2040년 이후에는 세계 15위권 밖으로, 2050년 이후에는 20위권 밖으로 하락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❷ '자랑스런 과거, 불만스런 현재, 불안한 미래'의 핵심 원인은 돈, 안전, 사회시스템 그리고 복지

돈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존재합니다.

- 낮은 가처분소득(높지 않은 소득, 높은 생계비), 증가하는 가계부채, 불충분한 노후 대비와 부족한 사회안전망, 산업 경쟁력 저하 및 좋은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가 만연하지만 현재의 저성장 흐름 속에서 이를 개선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안전에 대한 위협이 존재합니다.

- 자연적·사회적 재난과 재난 대응책의 부재, 북한 위협과 국가안보 불안, 인구 감소, 지역 간 불균형, 지역 소멸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시스템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존재합니다.

- 민주주의 위기, 사회갈등의 심화, 자유·정의·평등·평화의 가치 퇴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복지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존재합니다.

- 요원한 복지국가, 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항상 존재하는 재원 문제(국채 발행과 증세 사이에서 논쟁만 반복 중)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지만, 현재의 저성장 상황에서 공공 재정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❸ 정책 공백으로 가중되는 경제 위기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 원화 가치는 1년 사이 14.22% 하락했고, KOSPI 시총이 250조 원 증발하는 등 자본시장이 불안정해 우리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시총 100위 기업 중 미국 기업은 60개, 중국 기업은 10개, 영국 기업은 5개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기업은 1개에 불과합니다. 신규 특허 출원인 수와 특허 비중은 2020년 이후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성장 정책 기조 실종으로 우리 경제는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외 리스크 관리가 잘되지 않는 등 경제 위기 대응력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2. 해결 방안

성장 우선, 산업정책 주도, 삼성전자 6개 만들기, AI 주도, 문화 주도, 안보 주도 전략으로 골든 타임 5년을 재도약의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❶ 성장 우선 전략

국가 성장 전략의 첫걸음, 파괴적 혁신에서 시작됩니다.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저성장은 선진국의 숙명이고,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다'는 현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산업 생산성과 혁신 자본을 통한 새로운 성장 가능성과 국제관계,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기후변화 등의 기회가 존재하므로, 잠재성장률은 한계가 아닌 정책으로 높일

수 있는 목표치로 인식해야 합니다.

- 젊은 인구의 감소는 사실이지만 생산성 혁신과 효율적 투자로 극복 가능하며, 성장의 방향을 기존의 인구 중심 성장에서 산업 혁신 중심 성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산업 혁신을 통해 새롭게 성장한 미국과 독일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혁신과 산업정책을 통한 새로운 성장 경로 창출이 가능합니다.
- 능력 있는 리더십, 학자·관료를 넘어서는 전문가, 전문성과 의지를 갖춘 컨트롤타워 등 강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❷ 산업정책 주도 전략

재정정책 중심에서 산업정책 중심으로 성장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전 세계는 산업정책 전쟁에 돌입하였습니다. 빅테크 육성, AI·문화·안보 주도 성장, 시장 확대와 인재 육성, 일자리 및 슈퍼 클러스터 마련은 모두 산업정책의 영역이므로 재정정책은 산업정책에 대한 지원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 보호무역주의 확대,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 안보 이슈 전환 등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가가 산업에 적극 개입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기존의 간접적 산업정책에서 한 발 나아가 기업 육성을 위한 직접적인 산업정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 자금(모험자본의 적극적 조성·공급, 자본시장 육성), 인재(부족한 전문 인재 확보 지원, 교육 혁신 및 중장기 인재 육성), 판로(혁신 제품 공공구매 등 혁신 조달,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시장 확대)의 3대 포인트를 기업에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❸ 삼성전자 6개 만들기 전략

ABCDEF(AI, Bio, Culture, Defense, Energy, Food) 빅테크 기업 주도 성장을 위한 50조 원 이상의 ABCDEF 모태펀드, 2조 원 이상의 ABCDEF 혁신 조달이 필요합니다.

- 빅테크 기업이란 첨단기술과 플랫폼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술 기업을 의미합니다.
- 우리는 유니콘(시가총액 1조 원 이상)기업 100개, 데카콘(시가총액 10조 원 이상)기업 10개, 헥타콘(시가총액 100조 원 이상)기업 6개를 우선 육성해야 합니다.
- 50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과 글로벌 협력으로 빅테크 후보 기업에 연간 10~20조 원 이상을 투자하며, 스타트업 금융 설립으로 창업 기업 융자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연간 2조 원 규모의 공공부문 혁신 조달을 통해 빅테크 후보 기업에 상품 판로를 제공하는 한편, 민관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글로벌 유니콘 펀드를 조성하고 신아시아 전략 등을 수립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❹ AI 주도 전략

'Magnificent 7' 기업들을 능가하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장 앞서 나가는 정보화 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 Magnificent 7(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총 13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의 GDP는 약 1.7조 달러이며,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2500억 달러이니 차이가 현격합니다.
-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손잡고 데이터센터에 134조 원을 투자하고, 오픈 AI가 미국 정부 기관용 업무 보조 챗봇 '챗GPT Gov'를 제작하고, 트럼프 정부가 718조 규모의 AI 미·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등 집중 투자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GPU 보유량을 보면 메타가 15만 대, 마이크로소프트가 15만 대, 테슬라가 10만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가 2500대, LG가 2000대, 광주 AICA가 1000대를 보유 중입니다. 이 극심한 차이를 줄여야 하는 만큼, 정부는 10만 GPU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만들어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사용하는 국민, 가장 앞선 AI 테스트 베드로서의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합니다.

❺ 문화 주도 전략

K-컬처의 성장, 5000만 해외 관광객 유치, K-자영업의 새로운 한류화를 통한 문화 주도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 전체 일자리의 40%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서비스 사업과 자영업을 지원·구조조정 대상에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게임, 음악, 드라마, 웹툰, 영화, 출판, 스포츠, 뷰티 등 다양한 영역의 창작-유통-소비는 그 자체로 거대한 산업입니다. 문화 영역의 장르를 확대하고, 소수 스타에 집중되었던 관심과 지원을 롱테일 영역으로 확장하고, 적극적 투자를 진행해 K-컬처를 확대해야 합니다.
- K-컬처의 확대를 바탕으로 외국인들의 버킷리스트에 한국 관광을 추가시켜 5000만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음식·숙박·쇼핑의 혁신을 통해 매출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 전통적인 서비스 사업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합니다.

❻ 안보 주도 전략

국가안보의 영역은 국방에 치중했던 전통적 안보를 넘어 방위산업, 에너지 자립, 식량 자립, 펜데믹 자립, 반도체·6G·AI·보안 등의 기술 안보를 포함하는 비전통적 안보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 국가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의 투자(첨단무기 체계 전환 가속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선제적 백신 개발 투자, 핵심 기술 자립 R&D)와 전통 제조업 고도화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4강 실용 외교와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신아시아 전략을 수립하여 교류·경제·안보 3축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4강과의 협력 속에 새로운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시장 영역을 인도와 아랍·오세아니아·북아프리카로 넓혀 나가야 합니다.
- 문화·관광·서비스 성장과 연계한 교류, 기술·창업·인재 확보 등과 연계한 경제협력, 방위산업 및 비전통적 안보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21세기 최첨단 산업사회 효율성에 맞게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사회가 너무 후진 거 아닙니까?

홍기빈 소장
글로벌정치연구소

1. 질문의 맥락

산업의 이중구조가 사회의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우리 사회의 후진적 시스템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까요?

❶ 산업구조의 이중화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조업(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과 저부가가치 내수 서비스업(소상공인, 자영업 중심)으로 양분됩니다.

- 대기업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포함된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높지만,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낮아 임금 및 생산성 격차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 이로 인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대기업 정규직, 고소득 직군)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자영업·서비스업 종사자의 임금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❷ 저임금 노동자 계층의 고착화 ('300충' 문제)

300충이란 월 300만 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를 가리키며, 3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그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절망의 표현입니다.

- 저임금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우 소득 상승 기회가 거의 없으며, 중산층으로의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 비정규직, 플랫폼노동,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❸ 재벌 중심의 산업정책 및 혁신 부족

정부의 경제 지원 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신생 기업(스타트업, 벤처)의 성장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 대기업 위주의 R&D 지원이 많아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및 시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 특히 신산업(바이오, AI, 전기차 등)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미흡하여 해당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습니다.

❹ 지역 불균형 심화 및 지방 경제의 약화

경제 성장과 혁신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 지방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포함된 산업 기반이 부족하여 우수 인재와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 지방정부의 재정 및 행정 자율성이 부족하여 지역 주도의 혁신 및 산업 육성이 어렵습니다.

❺ 내수 서비스업의 저부가가치 문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음식점, 소매업, 숙박업 등)은 OECD 평균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고 임금 수준도 저조합니다.

- 사회적 수요가 높은 돌봄, 교육, 문화 서비스 분야도 저임금·고강도 노동환경으로 인해 질적 발전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 기술 혁신이 제조업 위주로 진행되어,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 및 효율성 개선이 더딘 상태입니다.

❻ 교육 시스템의 문제 및 인재 미스매치

대학 입시 중심 교육 체계로 인해 상위 30%의 학생들만 집중 지원을 받고, 나머지 70%의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 대졸자는 많지만,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배출이 부족하여 결국 청년실업과 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21세기식 산업구조 변화(AI,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 해결 방안

우리 사회는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신산업 육성, 공정한 산업정책 마련 및 스타트업 지원 강화, 지역 균형발전 및 혁신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노동환경 개선, 교육 개혁 및 실무 중심 인재 양성을 통해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루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❶ 산업 다변화 및 혁신 유도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바이오, 2차 배터리, AI,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 규제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야 합니다.
-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과 문화·콘텐츠업도 고부가가치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❷ 공정한 산업정책 마련 및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대기업 위주였던 지원 대상을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합니다.

- R&D 및 정책자금 지원을 '될 놈'(대기업) 중심에서 '언더독'(신생기업)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 스타트업·벤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M&A 활성화, 벤처캐피털 투자 확대, 규제 샌드박스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❸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 혁신 네트워크 구축

수도권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 지방정부에 재정·행정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 기업·대학·주민이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 아울러 지방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 내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❹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노동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및 공공 투자를 통해 돌봄, 교육, 문화 등의 필수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 서비스업 노동자(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의 임금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배달, 공유경제 등)의 노동권 보장 수준을 강화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❺ 교육 개혁 및 실무 중심 인재 양성

명문대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대학 및 특성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 대학 교육 이외에 지역 단위의 실무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 기업 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 실제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수명은 반도체 수명과 같이 가며, 지금까지의 인계철선은 38선이었지만 앞으로는 반도체 라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1위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전병서 소장
중국경제금융연구소

1. 질문의 맥락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투자 확대, 정부 지원, 외교 전략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❶ 반도체 산업의 위기와 글로벌 경쟁 심화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생존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미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 및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동시에 동맹국(한국, 일본, 대만 등)에 대한 기술 이전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❷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험성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이며, 2024년 기준 전체 수출의 18%(1202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무역 흑자의 절반(597억 달러)이 반도체에서 발생하고 있어,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면 GDP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도체 산업이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소재·부품·장비 등)에서도 일자리가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❸ 외국인 투자 의존도가 높아 경영권 위협 가능성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높은 외국인 지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지분율이 56% 이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도할 경우, 주가 폭락 및 기업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반도체 관련 주식 비율이 약 36%에 달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 국내 금융시장과 환율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 아울러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을 자국 반도체 공급망에 강하게 묶어 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경영권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❹ AI 시대의 도래와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GPU 및 고성능 메모리(HBM)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AI 산업에서 필수적인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53%)와 삼성(38%)이 시장 점유율 91%를 차지하고 있으나, AI 칩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 TSMC가 점유율 64%로 세계 1위이며 삼성의 점유율은 12%로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 AI 반도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AI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❺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취약성

반도체 산업의 핵심 공급망이 아시아(한국, 대만, 중국, 일본)에 집중되어 있어, 지정학적 갈등(미중 대립, 대만 문제 등)이 심화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대만이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전쟁 등의 위기를 겪을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평택 반도체 라인이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❻ 파운드리의 기술 격차 축소가 AI 시대 안보와 경제·외교의 관건

AI 반도체에서 최강자가 되면 경제 문제와 외교·안보 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전쟁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레버리지를 걸 수 있는 위치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가 대만 TSMC의 기술을 넘어서는 순간, 북핵 위협도 해결됩니다.

AI 시대의 핵심인 첨단 반도체 확보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이 참전하여 국가 대항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은 치명적으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 산업으로 라인당 약 250억 달러의 투자 금액이 필요합니다. 투자 금액에 대한 정부의 지원(보조금, 세액공제 등) 비율은 미국이 28%, 일본이 54%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6%로 매우 저조하여 국내 반도체의 경쟁력 향상을 막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최상위를 유지하려면 HBM 분야에서는 현재의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하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투자를 확대하고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❶ 기술 격차 유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HBM 분야에 대한 R&D 지원과 세금 감면 확대가 필요합니다.

- 기업의 R&D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기업이 R&D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중국의 경우 28나노 이상의 기술을 가진 기업에는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❷ 반도체 인력 양성과 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 확보 필요

우리나라에는 전력 공대가 아니라 반도체 공대가 더 시급합니다.

- 정부의 2025년 의대 정원 확대는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충격을 가했습니다.
- 반도체공학과에 갈 수 있는 인재가 의대로 몰리면 10년 후의 의사 부족 문제가 아니라 4년 후의 반도체 엔지니어 문제가 더 급한 발등의 불이 될 것입니다.
- 반도체 공과대학을 설립하고 학생들의 생활과 교육 환경, 교수의 처우와 연구·개발 환경을 파격적으로 조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은 반도체 회사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해야 합니다.

❸ 국가 주도 반도체 기업인 KSMC 설립 필요

전 세계 1등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와 3등 업체인 중국의 SMIC와 같이 우리도 정부가 대주주인 KSMC를 설립해야 합니다.

- 애플, 퀄컴, AMD 등 세계 3대 파운드리 소비자가 모두 삼성전자의 제품 경쟁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파운드리 위탁을 기피하는 현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삼성파운드리를 바탕으로 KSMC를 설립해야 정부 보조금 지원, 인력과 고객 확보가 가능해져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 KSMC에는 3:3:3(기업 3, 연기금 3, 국민주 3) 지배구조가 필요합니다. 경영은 기업이 하고, 지원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하는 구조입니다.
- 완전 분사가 어렵다면 신규 라인별 자회사 구조를 갖추고,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형태로 변화시켜 고객이 기술 유출을 우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중국 SMIC의 경우 정부와 지방정부가 라인별 자회사에 투자하는 형태로 기금을 지원하고, 이를 지주회사 구조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반도체 산업의 능력을 토대로 5~10년 이상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과감하게 투자하고 인재를 확보한다면 TSMC 및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격차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마침내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왜 기업가형 혁신 창업 국가를 추구해야 할까요?

홍장표 교수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1. 질문의 맥락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가형 혁신 창업 국가를 향한 국가 혁신 체제와 신산업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❶ R&D 투자 기반 국가 혁신 체제 구축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IT·에너지·환경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R&D 투자 기반의 국가 혁신 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 전환하여 정부가 혁신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떠안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벤처캐피털 역할을 담당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산업 전환기에 이르러, 미래 신산업 창출과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연구 개발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기업가형 혁신 창업 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수출 제조업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과 중국 제조업의 급성장에 따라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의 전통 제조업은 수출 둔화와 가동률 저하로 인한 과잉 설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한편 반도체, 배터리, 미래 자동차 분야의 경우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관세 등에 의한 무역장벽 강화 속에서 대기업의 주력 투자처가 국내를 떠나 미국 등의 해외시장을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주요국은 정부가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민간이 기술사업화를 맡는 시장형 국가를 넘어 정부가 미래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기업가형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과거 개발 시대에 우리나라 정부는 전략산업을 직접 선별해 지정하고 보호·육성하는 전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자유무역주의가 널리 퍼졌던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민간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주도하고 정부 개입은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기초연구와 인력 양성 분야로 최소화하는 시장형 국가가 부상하여,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크게 후퇴하였습니다.
-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이 격화된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이 미래 기술 우위 선점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앞다투어 산업정책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❷ 미래 신산업 창출과 국내 주력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코로나19 위기 이후 산업 전환기를 맞아 미래 신산업 창출과 국내 주력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R&D 투자 확충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벤처기업의 창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첨단기술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술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미국은 첨단기술과 공급망 문제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반도체 및 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했으며 미국 내 제조 공장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미국의 첨단산업 기술·공급망 디커플링 전략에 대해 중국은 자립적인 기술혁신 체제와 중국 내 홍색 공급망 구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조 2025'와 '반도체 굴기'(2015년), '14차 5개년 경제 규획'(2021년) 등을 통해 반도체, 신소재, 신에너지 등 첨단산업의 자립률을 높여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EU는 배터리,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제품의 자립화를 도모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국 기술 보호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경제안보법'(2022년)을 제정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 시대에 중화학공업화 정책 등 적극적 산업정책으로 수출 대기업을 육성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민·관 합동으로 공격적 R&D 투자를 진행해 기술 역량을 높였습니다.

- 김대중 정부에서는 재벌 대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벤처 창업 붐을 조성하였습니김대중 정부에서는 재벌 대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벤처 창업 붐을 조성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모태펀드와 한국벤처투자 설립(2005년)으로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가 R&D 예산을 대폭 늘리고(2017년 20조 원→ 2022년 30조 원), 혁신 모험 펀드 조성(2018년), '벤처투자촉진법' 제정(2020년) 등으로 제2의 벤처 붐 조성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연구개발 투자액이 100조 원을 돌파하여 GDP 대비 비중 4.9%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5.8%)에 이어 세계 2위 자리를 굳혔으며, 투자액의 절대 규모 또한 세계 5위로 성장하였습니다. 벤처캐피털(VC) 신규 투자액도 2017년 2.4조 원에서 2021년 7.7조 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❸ R&D 사업과 위험 감수 투자 정부 지원

세계 각국에서는 위험부담이 매우 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R&D 사업과 위험 감수 투자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R&D 예산 투입으로 기술 투자를 촉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 R&D 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국가였기에, 제조 강국에서 R&D 강국으로 빠르게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 벤처 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벤처 왕국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은 물론, 캐나다, 영국, 호주 등 글로벌 기술창업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 펀드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며,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VC 시장이 발달한 미국이 오히려 예외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의 성공에 얽매여 수출 대기업 육성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책을 고집했습니다.

- '민간 주도 성장'을 내걸고 국가 R&D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정책 효과가 불확실한 대기업 감세에 주력했습니다. VC 시장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경시한 결과 벤처 투자는 위축되었고 벤처 붐은 사그라들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VC 신규 투자액은 2021년 7.7조 원에서 2023년 5.4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OECD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중은 뒷걸음쳤으며(0.27%→ 0.15%), 이스라엘(2.86%), 미국(0.73%), 중국(0.42%), 캐나다(0.33%)와의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줄어들자 창업 3년 미만 스타트업의 자금 부족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기술창업 기업 수는 2021년 23.9만 개에서 2023년 22.1만 개로 감소했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창업 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VC 투자마저 위축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돌입해 기술 투자가 절실한 시기인데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2. 해결 방안

기업가형 혁신 창업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신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가 R&D 예산을 확충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혁신 체제를 확립하고,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혁신 기술을 다루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❶ 기업가형 혁신 창업 국가 지향 신산업 정책

기업가형 혁신 창업 국가를 향한 신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R&D 기반의 국가 혁신 체제 확립과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이 핵심입니다.

미래 신산업 창출과 주력 산업의 밸류 업 과제에 부합하는 R&D 기반 국가 혁신 체제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인재 양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 개방형 혁신은 기업 내 자원에 의존하는 폐쇄형 혁신(closed innovation)과 달리 기업 외부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형 혁신으로, 신생 기업의 활발한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신생 기업은 예전의 기술로 시장을 확보한 기존 기업에 비해 신기술 창출과 창조적 파괴에 적합합니다.
- 돌파형(break-through) 혁신은 기존 기업보다는 신생 창업기업에서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오픈 AI, 중국의 딥 시크가 이를 증명합니다. 기술창업을 통해 벤처기업,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열린 혁신 생태계의 구축이 R&D 기반 국가 혁신 체제의 요체입니다.

❷ 혁신 투자 촉진 조세제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개편으로 국가 R&D 예산을 확충하여 연구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정부의 벤처캐피털 기능을 강화하여 혁신 기술을 사업화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R&D 기반 국가 혁신 체제에 부합하도록,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연구개발 투자와 고용창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 세액공제 제도는 연구개발 투자 세제와 고용 세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고용창출에 부합하지 않는 통합 투자 세제는 고용 친화적 투자 세제로 개편합니다.
- 고용을 창출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던 과거의 고용창출 투자 세제(2011~2017년)가 고용 친화적 투자 세제의 한 예입니다. 세액감면 제도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제도와 같이 투자나 고용 활동과 무관하게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를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조세제도 개편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국가 R&D 예산을 확충하여 연구인력 양성과 기술 사업화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창업·벤처기업 육성에 활용합니다.

정부가 조성한 모태펀드를 민간 VC에 출자하여 벤처기업에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VC 시장에 대한 정부 출자와 정책 펀드 조성은 민간투자를 촉진합니다.

-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모태펀드 출자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세(조세지출), 정부 소비, 정부 투자 등 다른 재정지출에 비해 VC 분야의 재정지출승수(재정 투입 대비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계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 VC 투자는 모태펀드와 민간 VC 출자금의 매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005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의 국내 모태펀드 출자 금액은 총 16.5조 원이며, 여기에 매칭된 민간의 출자금이 21.9조 원으로 모태펀드 대비 약 1.7배의 민간자금이 투자되었습니다.
-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의 수익률도 양호합니다. 2023년 말까지 청산 완료된 276개 모태 자펀드의 수익률은 연평균 7.5%였습니다. 모태 자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회수되어 다시 투자됩니다.
- 그동안 벤처기업은 기존 4대 재벌그룹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기술창업과 벤처기업이 미래 인재 육성의 산실입니다.

❸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정책 펀드 확충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정책 펀드 확충으로 연구개발 투자 및 VC 시장에서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책 펀드는 우리의 기술창업과 벤처산업을 견인해 온 주요 원동력이었습니다. 모태펀드·성장 금융 등의 정책 펀드를 확충하는 한편, AI·빅데이터·바이오·로봇·반도체·신소재·항공우주·에너지·환경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과 민간 VC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모태펀드는 창업 초기 투자에 집중하고, 성장 금융 등 기타 정책 펀드는 스케일 업 투자에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VC 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❹ 중앙·지방정부가 공동 출연 모펀드 조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출연하여 지역 모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전략산업의 창업과 VC 투자를 지원하고 지방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벤처투자 회사의 91%, 창업 기획자의 68%가 수도권에 위치하며 벤처투자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수도권, 대전 등 일부 지역에 조성된 벤처생태계를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전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 경제는 기존 전통 산업체의 해외 이전과 구조조정,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로 인한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 소재 수출 대기업의 분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마당에 민간투자만으로 지방 경제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❺ 유니콘기업 양성 벤처투자 유치

창업·벤처기업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글로벌 벤처투자 유치가 필요합니다.

- 이스라엘의 벤처산업이 활성화된 비결은 모태펀드인 요즈마펀드와 글로벌 VC 자금 유치에 있습니다. 요즈마펀드는 해외 VC 참여가 필수 요건이며, 투자자금의 90%를 해외에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글로벌 VC 유치 상황은 매우 저조합니다. 국내외 대형 VC 투자 유치로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이 인류의 문제를 푸는, 인류 전체에서 최상위권에 드는 기업이 되려면 대한민국 정부는 무얼 지원해 주어야 할까요?

류중희

1. 질문의 맥락

미국에서 몇조 원씩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과 우리나라에서 몇백억 원 투자를 받기도 힘들어하는 스타트업 간에 경쟁이 가능할까요?

❶ 우리나라의 열악한 자본시장과 금융 시스템

인류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국내 창업자들은 이미 나오고 있고 이들의 연구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만큼의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 10여 년 전에는 주로 전자, 전산 등을 전공한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작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창업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로봇으로 대표되는 기계공학은 물론이고 화학·생물학·의학 등 이른바 하드 사이언스 분야 종사자들이 창업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세계적으로 많이 인용되고 상을 받은 논문을 낸 연구자들도 많습니다.
- 이들의 연구와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너무 취약합니다.

❷ AI 연구 경쟁으로 천재급 인재 확보 경쟁 심화

세계적인 연구자들을 얻기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노벨상 2개 부문은 난제를 풀어낸 AI가 수상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AI는 단순히 우리 일상의 문제를 푸는 차원을 넘어 인류가 새로운 지식의 지평을 뚫을 수 있도록 돕는 조언자·조력자로서 이미 자리매김했습니다.
- AI를 대규모 모델로 훈련시키고 추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으로 많은 GPU 등의 컴퓨터 자원과 수많은 연구자들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연구자들을 얻기 위해 전 세계적인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재급 인재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연구자의 연봉이 수십억 원에 이를 정도로 가치가 치솟고 있습니다.

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우리나라의 모험자본 시장 부재

끝까지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지원되어야만 하는 영역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경험도 없습니다.

- 최근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로봇과 AI의 교집합 영역'인 이른바 '피지컬 AI' 또는 '리얼 월드 AI'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 이 영역에서는 '지금까지의 AI 연구 성과를 로봇에 집어넣어 AI로 로봇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고도의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현실과 창업 초기 이후에 IPO 등의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동차보다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제품을 어디서 양산하나요?", "어디서 이런 로봇을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같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취약점 중 하나는 증권시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해,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임에도 시가총액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만들어진 지 1~2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들이 첫 번째 시드라운드(seed round)에 1~3조 원 정도 되는 펀딩을 받고, 기업가치 2~5조 원을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 미국과 우리나라에 똑같이 훌륭한 연구자들이 있다고 해도, 미국에서는 몇조 원씩 투자를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몇백억 원의 투자도 받기 힘들다면 경쟁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2. 해결 방안

정부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강한 자본시장을 가질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과 5~10년 안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❶ 장기적인 방안: 자본시장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자본이라는 시장에 대해 어떤 관점과 철학을 가질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하고 하나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여러 정부가 서로 이어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6.25 직후였던 75년 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자본시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자본시장을 미국과 겨룰 만한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다시 75년을 노력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선택할 때, 싱가포르와 같이 자본시장을 글로벌 지향적으로 오픈하고 이에 맞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극단적인 자유경제를 추구하는 시스템 또는 최근 글로벌 투자를 늘리고 있는 UAE 등 중동 국가의 국부펀드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존에 지켜 온 가치보다는 앞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자체를 글로벌 플레이 그라운드로 개방하는 방식의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❷ 단기적인 방안: 국내외 자본 조달

새로운 정부는 미국의 벤처캐피털이 우리나라 시장과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 AI와 로보틱스 패권은 길면 10년 짧으면 5년 내에 자리를 잡을 것이고, 그때 세계 1~5위 기업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 이른바 스타트업 문화·벤처 문화를 만든 국가는 미국이며, 미국에서 수조 원 단위의 투자를 하는 벤처캐피털은 한국 시장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 미국의 벤처캐피털들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회사, 이른바 델라웨어 시콥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아니면 투자를 거의 하지 않으므로, 결국 미국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을 미국에 만들건 일본에 만들건 한국에 만들건 그 시작점이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에 R&D 센터가 있고,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채용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산업계에 좋은 임팩트를 준다면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해당 법인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우리 연구자들이 우리의 자본으로 우리나라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 것만으로 전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구자가 훌륭해.",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 데이터가 굉장히 의미 있어.", "그런데 우리 자본은 약하니 자본이 가장 강한 미국을 끌어들이고, 첨단 공정은 일본과 대만이 강하니 두 나라도 끌어들이자."와 같은 방식으로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 인류적인 게임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흐름을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회사는 어떤 나라에 속한 회사가 아니라 인류의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조달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 과거 산업사회 시대처럼 “이 회사의 국적이 어디야?”, “이 회사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어? 1차적으로 세금을 어디에 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국적을 판별하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 자본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 ‘우리의 우방국들과 함께 인류 전체의 지혜를 모아서 글로벌 스케일의 게임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내는 것이 다음 정부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태펀드는 공공성과 수월성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하니 공공성에 중심을 두는 방향(모태펀드 1)과 수월성에 중심을 두는 방향(모태펀드 2)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모태펀드 1’은 창업을 할 때 자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최대한 많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되 성공한 회사가 실패한 회사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은행 금리만큼의 수익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을 최소한으로 쓰면서도 창업을 최대한 장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모태펀드 2’는 철저한 이익 기반으로 국가대표 선수급의 슈퍼 엘리트 회사에만 투자합니다. “미국에서 1조 투자를 받았다면 우리나라에서도 1조 투자 받게 해 줄게.”라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1년에 10개 회사에만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를 잘하는 벤처캐피털과 협력해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혁신 성장을 위한 리더십과 거버넌스 운영, 가능합니까?

하준경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1. 질문의 맥락

대한민국 경제는 혁신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❶ 지속적인 경제 성장 중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새로운 기회가 사라지고, 기회가 사라지면 사회적 약자와 청년 세대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갑니다.

-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성장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 과거에는 투자를 해야 할 곳이 자명했으나, 선진국으로 진입한 후에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그 해결책이 바로 혁신 성장입니다.

❷ 혁신 성장의 핵심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

기술 혁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함과 동시에 기존 기득권과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미흡한 보상은 혁신 성장에 장애가 됩니다.
- 기존 기득권 기업이 작은 기업의 혁신 기술을 탈취하거나, 혁신 관련 이해관계자인 기득권이 저항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❸ AI 및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큰 과제

4차 산업혁명은 혁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개발 시대 스타일의 국가 주도 혁신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 현대사회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게 얽힌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한 주체만의 주도로는, 그 주체가 설령 국가라 할지라도 혁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 결국 국가, 기업, 시민사회(전문가, 시민단체, 이해집단 등)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문제는 국익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해결 방법을 다양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에너지 문제가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어 정권에 따라 정책의 편향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2. 해결 방안

민주당이 혁신 성장을 위한 리더십 발휘와 거버넌스 운영에 힘써야 합니다.

❶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

이해관계에 있는 주체들 간의 충돌을 조정하고 서로 Win-Win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 기득권 강자가 지닌 힘의 논리에 의존할 경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을 추구하는 시스템, 여러 주체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❷ 혁신적 거버넌스 운영 필요

사회 전체가 새로운 길을 열고, 길을 만들고, 함께 그 길을 달릴 수 있도록 국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국가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회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각 사회 구성원이 부족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❸ 혁신 기업 투자 강화

공공 부문의 개혁과 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 혁신 기업을 만들 수 있는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 배달의민족, 쿠팡, 토스 등이 모두 외국자본 투자에 의해 성장한 혁신 기업이라고 볼 때, 앞으로 우리의 금융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혁신 기업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시급히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만으로 대한민국 경제, 미래는 있을까요?

김판건 대표
미래과학기술지주

1. 질문의 맥락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저출생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혁신적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 혁신, 산업 구조 고도화, 인재 양성이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심축입니다.

❶ 성장 동력 약화

우리나라는 과거에 추격형 성장 모델(catch-up growth model)을 통해 고속 성장을 이루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나 현재는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경쟁 격화, 내수 시장의 정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 과제는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국가 지속 가능성 위협: 저성장과 저출생의 지속은 경제 활동 인구 감소,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 불만 및 불안 심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안전망 미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삶의 질 저하: 성장 동력 상실은 소득 및 자산 증가의 정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간 균형 발전, 사회 서비스 및 안전망 강화에 대한 투자 여력을 약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❷ 사회적 딜레마의 존재

각종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존 산업 구조의 경직성과 혁신 간의 갈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시스템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를 보여 혁신을 주도할 인재 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혁신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보존 간의 균형: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안정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정치·사회적 이념 대립: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포퓰리즘적 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관점이 요구됩니다.

2. 해결 방안

저성장과 저출생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혁신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산업 성장 구조 혁신'입니다.

딥테크 산업 육성과 초광역 슈퍼 클러스터(super cluster) 조성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 이러한 혁신의 목표는 향후 10년 내에 대한민국 시가 총액 상위 10대 기업이 기존의 레거시(legacy) 기업에서 스타트업 기업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같이 기업 생태계를 스타트업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❶ 딥테크 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 지원

우리나라에 적합한 딥테크 분야로는 인공 지능·로보틱스, 에너지·환경, 바이오테크, 우주 항공·국방 등이 있습니다. 이들 분야의 성장은 국내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 딥테크 분야에서 글로벌 초거대 기업(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골프의 박세리와 같은 독보적인 존재)이 탄생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미국과 같은 역동적인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창업 투자 생태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과 창업 투자 생태계가 수도권만큼 커져야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직속 성장실 설치: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성장실을 설치하고, 성장 전략 추진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합니다.
- R&D 투자 확대: 딥테크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를 확대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연구 자금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합니다. 연간 30조 원 규모의 R&D 투자를 5년 내 60조 원으로 두 배 확대하며, 미국의 NAIRR(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Resource)나 영국의 AI Opportunity Action Plan을 참고해 인공 지능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를 극대화합니다.
-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산학 협력 강화: 우리나라의 강점과 글로벌 수요를 고려해 전략적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육성합니다. 또한, 4대 과기원(KAIST, POSTECH, GIST, DGIST)과 생명연, 기초연 등을 통합해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고, 대학·연구소·스타트업 간 협력을 강화해 기술 사업화를 촉진합니다.
- 투자 생태계 활성화: 벤처 캐피털, 엔젤 투자자,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투자 채널을 확대해 딥테크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현재 연간 10조 원 규모의 투자 생태계를 50조 원 규모로 확대해 유니콘(unicorn), 데카콘(decacorn), 헥토콘(hectocorn)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규제 혁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실험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합니다. 또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기업 친화적인 설립 및 세금 제도가 시행되는 특구를 지정합니다. 미국 델라웨어 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초광역 슈퍼 클러스터 조성: 지역 중심의 산업 단지를 넘어 R&D, 첨단 설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인재, 창업 분야를 집적하고 연계하는 초광역 슈퍼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예: 대전·세종·충청권역)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딥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지원합니다.
- 글로벌 인재 유치: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국내 인재를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❷ 산업 구조별 우선순위 설정

산업 구조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부 예산 확대를 통해 적절한 투자액을 분배합니다.

특히, 적은 투자로 글로벌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과 장기적인 딥테크 중심의 구조 개편에 필요한 산업을 구분하여 적절히 투자해야 합니다. 초광역 슈퍼 클러스터가 육성하는 산업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 구조 우선 순위 설정: 적은 투자로 글로벌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예: 국방·조선·반도체·배터리, KSMC)과 장기적인 딥테크 산업 구조로의 개편(AI·로보틱스, 에너지·환경, 바이오, 국방·우주 항공)에 필요한 산업 분야를 적절히 나누어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역별 선택과 집중: 초광역 슈퍼 클러스터가 육성하는 산업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여,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지역별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 정부 예산 확대: 정부 예산을 확대해 전략적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에서와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왜 재벌 후손이 아닌 새로운 큰 부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존리 대표
존리의 부자학교

1. 질문의 맥락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경직된 사고와 잘못된 교육, 노동시장의 경직성, 금융 산업의 후진성, 복잡하고 과도한 규제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건가요? 싱가포르처럼 금융 중심의 개방적 경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❶ 경직된 사고와 잘못된 교육

크게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경직된 사고와 잘못된 교육이 망치고 있습니다.

- 시험에 변별력이 왜 있어야 합니까? 사람의 재능은 모두 다른데, 수능시험 점수로 줄을 세우는 것은 가장 공정하지 않은 평가 방식입니다.
- 공무원을 하겠다는 사람만 많고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나라에는 외국 자본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 경직된 사고와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다양성이 사라진 우리 사회는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30%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수능시험은 과감하게 없애는 정도의 교육 개혁을 함으로써, 모두가 각기 다른 재능에 걸맞은 평가를 통해 100점을 맞을 수 있을 만큼 다양성이 확보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❷ 노동시장의 경직성

노동의 유연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노동자를 오히려 괴롭히고 있습니다.

-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경직된 노동법입니다.
- 회사가 어려워져도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법체계 때문에, 회사가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 유럽의 경우 근무시간 제한은 생명을 다루거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적정한 휴식이 필요한 직업군에만 적용하는데, 우리나라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노동시장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계의 경우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❸ 금융 산업의 후진성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는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우리 사회가 다음 레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이 발전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국민 역량이 뛰어남에도 금융 산업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 강국의 모델이 아닌 금융 후진국인 일본의 모델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정부 관료의 과도한 개입이 일본의 경제와 금융을 망쳐 놓은 것인데,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같은 관치금융(국가가 심판의 역할을 넘어서 과도하게 개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수익을 거두는 것을 국부 유출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외국 자본 투자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이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 등 국제적인 투자은행과 증권회사를 유치한 싱가포르나 홍콩과의 차이입니다.
-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 자본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없애야 합니다.

❹ 복잡하고 과도한 규제

우리나라에는 금융 산업을 막고 있는 복잡하고 과도한 규제가 존재하고, 이는 과도한 상속세에 따라 만연해진 편법 상속, 과도한 자산운용업 규제에 따른 금융 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상속세 제도가 주식을 이용한 편법으로 부가 세습되는 현상을 강화하고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상황을 일으킵니다.
- 우리나라의 금융은 은행과 보험회사 중심이어서, 부자는 돈을 빌리기 쉽지만 담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습니다. 이는 금융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며 혁신적 기업의 탄생을 막습니다.
- 아울러 과도한 규제로 가장 중요한 자산운용사의 숫자와 이러한 회사가 움직이는 금액이 적어, 개인 또는 기업이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담보 없이는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 없기에 혁신 창업이 이루어지거나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지난 20년 전과 비교해 미국에서는 새로운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출현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 대기업 순위의 변화가 없고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 산업의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2. 해결 방안

금융 교육 강화와 창업 활성화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해 교육 개혁, 창업 지원, 퇴직연금 개혁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❶ 금융 교육의 체계적 도입

아이들을 학원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모든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원으로 몰려가기에 아이들이 없어진 길거리,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만 찾는 사회 분위기는 역동성이 사라진 일본의 뒤를 따르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 학생들을 위한 금융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의 제대로 된 금융 교육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자산운용사가 아닌 보험사나 은행이 관리함에 따라 연금이 기업에 투자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이고, 연금 보장이 되었다는 인식 때문에 금융 교육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의 사업자인 자산운용사가 금융 교육을 담당하고, 국민들은 적극적인 주식 투자 등을 통해 퇴직 이후를 정교하게 준비합니다.

❷ 창업 정신 함양과 창업 및 금융 활성화

청년들이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렵지 않게 투자를 받으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 창업을 통해 새로운 기업이 많이 나오고, 수많은 자산운용사가 창업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며,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 개혁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10년 후 신흥 부자들이 대거 나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아울러 국민들이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금융 교육, 주식 교육 등을 받아 누구나 자연스럽게 주식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나도 투자자·자본가다'라는 마음을 갖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어 삶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전히 풀어 주는 대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규제를 풀어 주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규제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며, 과도한 규제 때문에 사회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 예를 들어 과도한 상속세는 온갖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상속세를 낮추려는 행태를 만연케 하여 부정부패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본의 외국 유출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은 세계 꼴찌 수준이고, 그 원인은 어려운 수능시험으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 금융 교육 부재, 투자에 대한 편견에 있습니다.

❸ 퇴직연금 개혁 및 자산운용 활성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규모는 500조 원 정도이며 향후 1000조 원에 이를 것이므로, 퇴직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 미국의 경우 1975년 퇴직연금 개혁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나라, 즉 금융 강국이 되었습니다. 월급쟁이의 돈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창업을 통해 새로운 기업이 커 나갈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 퇴직연금을 전부 해외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기업이 커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산운용 시장을 키워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운용이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미국에서는 2만 5000달러(약 3600만 원)만 있으면 자산운용업 허가를 내주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0억 원이 있어야 자산운용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업 진입 장벽이 높아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자산운용사 허가를 쉽게 내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은 소수의 자산운용사만 관리하면 되는 현 상황에 큰 불만이 없을 수 있으나, 돈이 필요한 창업자와 혁신 기업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됩니다.
- 미국에는 약 3만 개의 자산운용사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몇백 개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나마도 대부분 부동산에만 투자합니다.
- 금감원 등의 규제가 새롭고 다양한 자산운용업의 진출을 막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금융 사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공무원들의 정책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은 왜 점점 악화되고 있나요?

신현기 교수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1. 질문의 맥락

공무원들은 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❶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위 조항은 이른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굉장히 위태롭고 혼란스러우며, 이 때문에 국가 기관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 조항의 실현에 대한 관행이나 개념 등이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지금까지 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❷ 정치 권력의 주기적 교체와 공무원에 대한 정치 보복

정치 권력이 주기적으로 교체됨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정치 보복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영향을 줍니다.

- 지난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가 다음 정부에서는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국정 과제 추진이 어렵습니다.
-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정치 권력이 주기적으로 교체되었는데, 그때마다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었고 국가 정책이 5년 단위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되던 시절에는 권위적 정치 리더십이 이끄는 행정부가 정책 과정을 주도했지만, 민주화 이후로는 의회와 민주적 정치 리더십이 정책 과정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사회는 권력 교체기마다 이른바 권력에 줄 서기, 정책의 정치화 등에 휘둘려 왔고 이는 국가 역량 저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❸ 검찰의 정치적 중립 상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군이 사라진 자리에 사실상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자리 잡은 검찰은 이러한 공직 사회의 변신을 잘 보여 줍니다.

- 정권 초에는 날카로운 사정의 칼이 되었던 검찰이 정권 후반기가 되면 오히려 정권을 공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해결 방안

정치의 합의 수준을 높이고, 행정 공무원들의 전문 직업 주의(professionalism)를 강화해야 합니다.

❶ 양극화된 정치의 합의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 필요

정치의 합의 수준을 높여야 행정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정치의 합의 수준이 낮아지면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 관료들 사이에서 기회주의가 득세해 한몫 잡아 출세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되면 정책의 정치화가 가속화됩니다.

❷ 공무원 집단의 전문 직업 주의 강화 필요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확보된 행정력이 정치와 결합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가장 대표적 행태는 복지부동입니다. 현 정부 시기에 괜히 나서면 다음 정부 시기에 단죄된다는 인식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하지 않은 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 공무원 집단은 중심을 잡고 전문적인 행정을 통해 국가 중장기 과제를 책임성 있게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❸ 제도적 장치 마련 후 선례를 만들고 관행화하는 작업 중요

정교한 제도적 장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선례를 만들고 관행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탄핵의 조건이 포괄적임에도 탄핵 경험이 없지만, 우리는 벌써 세 번째 진행 중입니다.
- 탄핵과 같은 제도를 당파적으로 활용하는 선례를 만들면 이후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기 쉬워지고, 남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정합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례와 관행을 남기느냐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❹ 의회를 통한 시민의 통제와 권력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

시민적 통제는 결국 의회라는 제도를 통해 실현되어야 하며, 권력 기관들은 의회의 통제 아래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 시민적 통제는 자칫 여론 정치와 포퓰리즘으로 귀결될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요구는 의회로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컨대 국가 예산의 편성권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행정부가 갖지만 이에 대한 심의권과 의결권은 의회가 갖듯이, 각 권력 기관은 시민의 통제를 받으며 수평적 책임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가 대선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이 돼야 합니다.

❹ 민주당 제 1 대선 공약: 정치 보복 금지

탄핵 이후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첫 번째 공약으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를 내걸어야, 정치가 복원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 관행이 확립됩니다.

정치는 법과 관행 혹은 제도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상호 양보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 가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 우리는 오래도록 이어진 민주화 투쟁의 경험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정치에서의 협상을 굉장히 부패한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거대 악과 맞서는 순결한 우리'라는 순결 주의 정치관이 있는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선악 구도의 대결 정치가 협상과 타협을 터부시함에 따라 결국 정치의 문제가 법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 정치는 주장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치의 협상 과정을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순간 정치는 사라지게 되며 정당의 존재 이유도 없어집니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했던 선례가 존재합니다.

- 정치권에 대화와 타협, 양보와 협상의 기류가 생기고 그 결과로서 정치가 안정된다면 국가의 정책 생산성이 높아져 국민들이 정치권의 선택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❺ 국익을 위해 지지자와 맞설 각오

정치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되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지지자와 맞설 각오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이 자율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반대 진영과 협상할 수 있어야 정치가 복원됩니다.

- 정치는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장치이지만, 시민의 의견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무조건 강성 지지층의 뜻만 따르는 행위는 정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정치인은 대부분의 경우 시민의 의사를 따르겠지만, 국가의 중장기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내린 판단이 여론과 상충될 때에는 과감하게 여론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이 필요했다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해야 합니다.

얼어붙은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혁신적인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윤태범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 질문의 맥락

공직사회는 왜 혁신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나요?

❶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성 실종

우리는 현재 실패를 회피하고 안정을 지향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혁신은 미래를 지향하는 일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혁신성의 실종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실종입니다.

- 혁신은 미래 지향적인 행위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을 때, 지금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도전으로서의 혁신이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에 나설 때는 실패 가능성도 수용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 혁신성의 실종은 우리나라의 전 영역에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을 잃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불러일으킨 정부와 정책의 위기, 기술혁신을 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맞이한 위기 등 수많은 위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일부 위기는 국가 외부의 영향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국가 내부에 만연한 혁신성의 실종 때문에 일어난 위기가 다수일 것입니다.

❷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렸던 가장 중요한 동력은 '사람', 즉 '혁신'

혁신적인 국민은 우리나라의 성장을 가능케 하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혁신 국가의 상징으로 알려지게 한 핵심 기반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혁신적인 사람들이 존중받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혁신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하는 혁신 회피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른 반복된 정치적 사정(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 등)이 정부를 비롯한 공직사회 전반에서 혁신의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이로 인하여 공직사회에 혁신에 대한 무감각, 복지부동, 무사안일이 만연해 있는 실정입니다.
- 게다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지와 성장을 가능케 하는 혁신적 사고와 노력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혁신에는 본질적으로 실패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실패한 혁신을 비난합니다. 가장 혁신적이어야 할 청년들이 혁신보다는 안정을 선택하라는 사회의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❸ 감사원의 독점적 감사권이 공직사회의 혁신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

감사원은 감사권을 수단으로 삼아 독점적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으며, 외부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권한은 대통령의 권력과 결합되어 오남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줄여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선한 감사권을 행사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권력으로서의 감사권이 오남용되고 정치적으로 활용될 경우 감사원의 설립 목적은 유명무실해집니다. 오히려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적극적 행정을 가로막고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지 못하게 막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 정권이 교체되면 감사원이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진행해 전 정권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행위가 반복됩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내에서는 도전과

혁신을 주저하고 있고, 정부의 혁신성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 일으키는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독점적 감사권에 대한 분권화 등의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의 혁신성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모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는 단위 조직별로 자체 감사 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나, 감사원이 과도하게 행사하는 감사권으로 인하여 이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관 내 자체 감사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감사원이 공공부문의 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직사회에서 복지부동이 사라지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과잉 작용하는 감사원의 권한을 적정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혁신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국민으로부터 분리된 정부를 국민의 정부로 만드는 것이 혁신입니다.

❶ 정부 혁신의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은 국가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정부가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제대로 들을 때, 비로소 국민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열린 정부가 될 것입니다.

- 현행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정부가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하는 절차법에 불과합니다. 정보공개법이라는 명칭과 실제의 내용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해서 국가 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보 공개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❷ 얼어붙은 공직사회의 해동 분위기 조성 필요

공직사회가 자신 있게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국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다 실패하게 되면, 책임을 부과하기 이전에 혁신적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혁신 정책의 실패가 낙인이나 처벌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며 혁신을 꾀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 등의 보상이 주어지도록 인사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합니다.
- 현행 법령상에도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가 있으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차라리 안 하고 말지'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문화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 적극 행정, 혁신 행정을 장려하려면 감사원만이 아니라 해당 행정기관 내에 설치된 자체 감사 부서가 적극 행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관별 자체 감사 기구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에 있어 성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혁신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 기관과 공무원들이 다양한 혁신적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목표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 다양한 성과 지표를 설정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의 혁신적 노력과 그 의미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❸ 감사원 권한을 축소하고 각 기관별 자체 감사 기능 확대 필요

공공기관별로 자체 감사를 담당하는 조직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축소하는 대신, 그 권한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 감사 부서에서 제대로 행사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권의 총량은 유지하되, 분권화를 하는 것입니다.
-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감사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자체 감사를 담당하는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현격하게 취약해진 상황입니다.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체 감사 기구의 활성화를 적극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체 감사 기구의 활성화를 통해서 공직사회 내의 혁신성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❹ 국민권익위원회의 재편이 필요한 시점

과거에 옴부즈맨 기능을 수행하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하에서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기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 옴부즈맨은 행정권의 오남용, 적법하지 못한 행정 등 행정 문제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옴부즈맨 기관이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처리 기능은 굉장히 큰 흠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에 걸맞는 위상과 역할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중심의 옴부즈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상 흠결은 각급 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명칭상으로는 옴부즈맨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자문 기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자치와 기업체 협력 없이 행정의 역량만으로 사회문제 대응이 가능할까요?

이영재 정책실장
더가능연구소

1. 질문의 맥락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량이 어떤 연계 구조를 가지고 사회문제에 대응해야 하나요?

❶ 다양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신종 바이러스 출현과 팬데믹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는 이제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과 역량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은 과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지 또는 위기 발생 이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쉬운 점은 우리 공동체의 역량을 포함한 사회자본을 우리 사회가 심각할 정도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❷ 공동체성이 갖는 가능성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현실의 문제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나 호혜적 연대는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마을 자치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이 잘되고 있는 마을은 그렇지 않은 마을에 비해 현저히 적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문제 상황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고 누구에게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공동체가 파악하고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사회적인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국민 개개인이 각자 감내하는 대신 공동체 차원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문제를 풀어 갔고,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❸ 우리나라의 인적자본은 세계 2~3위, 물적자본은 10위권 이내, 사회자본은 100위권 밖

2023년의 국제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적·물적자본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사회자본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 우리나라의 사회자본 수준은 107위를 기록했습니다. 공동체성, 사회적 신뢰,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망 등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노인 빈곤율·저출산을 비롯해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고립도 증가 등이 우리의 사회자본 수준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❹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라는 기존 인식과 방식이 문제

사회적 위기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부담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정부가 아닌 개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 그간 우리 사회는 사회적 부담을 감내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감내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며 양극화를 심화해 왔습니다.
- 정부와 시장의 역할과 기능만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역량이 어떤 연계 구조를 가지고 사회문제에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2. 해결 방안

공동체 활동과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정책이 정권 변화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간 지원 조직에 안정성을 부여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균형 잡힌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❶ 사회적 공감대 확대 및 지원 체계 강화 필요

공동체 활동과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과거 서울시의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해당 지원금은 사업비로만 한정하여 쓸 수 있었고 인건비 지급이나 자산 취득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 행정 지원금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자원과 결합할 때 더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은 단순 지원의 역할에 머물기보다는 주민 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틀이 되어야 합니다.

❷ 중간 지원 조직 구축과 불안정성 해소

행정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일은 중간 지원 조직(마을공동체 지원 센터 등)이 담당해 왔으나, 이 조직은 3년 위탁제로 운영되어 고용 안정성이 취약합니다.

- 서울·대전·충남 등의 중간 지원 조직이었던 지원 센터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축적된 역량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중간 지원 조직은 민·관 연결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제도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❸ 기본법 제정 필요

공동체 활동과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공동체 및 시민사회 활동이 정권 교체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애써 쌓아 놓은 사회자본이 단숨에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마을 단위에서는 정치적 성향보다 삶의 질이 중요하므로 공동체 활동을 정파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지역 경제와 연계된 사회적 경제 활동은 여야를 초월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책의 효과를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정파를 초월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 단체에 지원이 쏠리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 새마을운동본부,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등 특정 단체들은 특별법에 의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그 외 시민사회단체나 마을공동체 활동에는 지원이 단절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관변 단체 중심의 기존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나라 살림을 아끼려고 합니까?

정창수 소장
나라살림연구소

1. 질문의 맥락

덮어놓고 국가 재정 아끼다 보면 결국 거지꼴 못 면하지 않을까요?

❶ 나라 살림의 지속가능성 중요

현재 국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지는 않았으나 세입으로 들어오는 액수를 크게 줄였기 때문에 이 점이 큰 문제가 되며, 결국 나라 살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현 정부의 경우 너무 많은 감세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심각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라는 구호가 현재 우리나라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초래했는데, 같은 의미로 국가 재정의 경우도 '덮어놓고 아끼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고 판단됩니다.

❷ 나라 살림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은 소득 재분배, 자원 재분배, 재정을 통한 경제위기 대응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도구는 재정이며,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들어오는 만큼 써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더 많이 써야 하는데 오히려 감세를 통해 재정의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큰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결국 공동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재정의 중요한 기능인 소득 재분배, 자원 재분배, 재정을 통한 경제위기 대응 기능 역시 크게 축소될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무엇이 국가 전체를 위한 이익인가를 국가 재정으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아야 국가 재정이 건전해집니다.

❶ 혜택이 확실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정책 시행 필요

의료, 교육, 주택 등에 대한 확실한 재정지출을 통해 납세자들이 내가 부담하는 세금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효능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 누구나 무조건적인 증세는 반대하지만 확실한 복지가 담보된다면 증세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줄일 수 있으며,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의 증세 등 여러 세원의 합리적 조정과 발굴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❷ 미래를 위한 정부 투자는 기본적으로 교육

지방 소멸과 관련된 요인 중 하나는 지방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지방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서울대학교 한 곳에 지원하는 예산이 다른 모든 국립 대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쟁력이 월등한 것은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쓰는 예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 KAIST, POSTECH, UNIST, GIST, DGIST 등이 지방에 있으면서도 성공한 이유는 그만큼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❸ 국가 재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

국가 세입과 세출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단순히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이 아닌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요합니다.

- 정부가 세수 추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거버넌스를 통한 정교하고 투명한 추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회계 검사를 위한 감사원을 두어야 합니다.

- 주요 선진 국가 중 국회에 감사원이 없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감사원의 기능이 직무 감찰과 회계 검사이므로 최소한 결산을 위한 회계 검사 기능의 감사원은 국회에 설치해야 합니다.

각 기관별 재정 감시를 촘촘히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 국가의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겨우 하나의 부서가 국가 전체 재정에 대한 회계 감사를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각 부처별 회계부서가 우선적으로 살피고, 기재부에서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와 국회 내에 설치된 감사원을 통하여 감시할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를 통해 함께 살펴보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50만 명 이상 지방 대도시에, 왜 대도시에 걸맞은 재정과 행정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임승빈 특임교수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1. 질문의 맥락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학 진학률과 경제성장률의 디커플링, 근로와 자산의 디커플링, 사회적 약자 계층과 기성 계층의 디커플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❶ 대학 진학률과 경제성장률의 디커플링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가 매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경제가 저성장되고 AI와 기계가 고급 인력을 대체하는 상황이 벌어져 실업자가 양산되고 빠른 퇴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과 보상 간의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평균적인 소득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학을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개선되지 않는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불만은 학교교육, 직업, 경제성장이 서로 부조화(mismatch)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 경제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자가 양산되는 상황이고 고학력자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한정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실업을 선택하는 이른바 고학력 잉여 인간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❷ 근로와 자산의 디커플링

일하지 않고서도 자산소득을 얻는 계층과 일을 하는데도 생계를 해결하기 어려운 근로소득 계층 간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이는 가장 선진화된 국가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 근로와 자산의 디커플링 수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가 크고, 수도권 내에서도 강남권과 강북권 간의 대비가 분명하게 두드러집니다.
- 자산이 열심히 일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잘해서 커지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정보가 편중된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❸ 사회적 약자 계층과 기성 계층의 디커플링

여성 차별 금지를 여성 우대로, 장애인 차별 금지를 장애인 우대로, 외국인 노동자 차별 금지를 외국인 노동자 우대로 여기는 20대 남성 계층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상대를 인권적 관점에서 평등의 상대로 보지 않는 시각, 그동안 경쟁자로 생각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시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 현재 장애인의 고용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학력자들이 3D 업종을 기피함에 따라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 고학력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한 결과 국가고시 합격자의 남녀 성비가 균등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7급·9급 합격자의 여초 현상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고위 관리직을 선발하는 외교관 시험, 사법·행정고시 합격자의 남녀 합격률도 거의 비슷합니다.
- 이에 따라 20대 남성 계층 일부의 마음속에 과거 기득권 강자였던 남성들이 사회적 약자 계층에 의해 자리를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❹ 권력의 집중화가 디커플링의 근본적 원인

지방에서 디커플링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된 상황이 이를 막고 있는 구조입니다.

- 지방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는 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인프라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중앙정부가 가진 권력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수도권에 개발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 그 결과로 양질의 일자리, 수입이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 도시에 대학 설립 인허가 권한, 공장 및 산업단지 조성 권한, 해외 투자 유치 권한 등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❶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 필요

산업화·민주화·도시화가 정착된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대부분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곳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직업 생활을 합니다. 따라서 대도시로의 집중 현상은 막기 어렵고,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 문제는 도시화가 아니라 도시화된 곳에 규모에 걸맞은 권력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는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 도시에 대학 설립 인허가 권한, 공장 및 산업단지 조성 권한, 해외 투자 유치 권한 등을 넘겨주지 않으면 결국 지방은 붕괴할 것입니다.

-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는 17곳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1곳이 수도권에 위치합니다. 이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특정 지역에만 공장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만든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 현재 대학 설립 인허가 권한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모델입니다. 각 지역이 지역사회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겨야 합니다.

❷ 중앙정부 재정의 지방 이양이 급선무

권력과 재원을 중앙정부가 모두 가진 구조하에서는 지방분권이 불가능합니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 새만금 사업의 사례를 보면, 정권 교체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변화와 편중이 극심해져 지역 간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B/C 비율을 기준으로 가성비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결국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노동력이 확보된 곳에 투자가 쏠리게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강화합니다.

인구 50만 이상 지방 도시에 대한 조세 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 중앙정부의 국세 중 일부를 지방 도시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제로섬 게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8:2였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문재인 정부에서 6:4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대략 7:3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제대로 된 지방분권, 재정 분권을 위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는 규모에 걸맞은 지방세 세목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❸ 혁신도시 개선 필요

혁신도시는 해당 지역에 정착하는 젊은 직장인이 늘어남으로써 부분적인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었으나, 기성 도시와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더 큰 지역적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 신규 인력의 30%를 해당 지역 대학 출신의 인재로 선발해야 하는데, 고향에서의 정주 및 지역 연고자의 귀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보다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 비율 또한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지역 인재를 기반으로 혁신도시와 기성 도시를 산업적으로 클러스터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의 장기적 위기, 이제는 민주적 통제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성욱 교수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 질문의 맥락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학 진학률과 경제성장률의 디커플링, 근로와 자산의 디커플링, 사회적 약자 계층과 기성 계층의 디커플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❶ 급격한 고령화와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

우리 사회 40~50대 중장년층 대부분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높은 수준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경제 구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어르신들의 자연적 사망과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불안정한 준고령자 계층이 끊임없이 빈곤층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30대, 늦어도 40대 초반부터는 머지않은 미래에 주요 노동시장에서 퇴출된다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40대 중·후반이 되면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현실 속에서 자녀 양육, 부모 부양을 해야 하니 개인의 노후 대비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삼중 부담은 우리의 열악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가 지닌 어두운 단면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장년 계층은 소득 보장 제도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 우리가 겪고 있는 '급격한 고령화'는 단순히 사회적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난하거나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노인에 대한 재정지출이 상당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효과적인 예방책이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❷ 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노인 인구 증가가 아닌 저출생

불안정한 준고령자의 폭발적인 증가를 고려할 때 이들을 사회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저출생 극복 여부는 재정 측면에서 고령화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 고령화로 인한 중장기적인 대한민국 복지재정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건이 정치인들에게도, 정부 관료들에게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정책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 왜냐하면 저출생 문제 해결은 오랜 기간 상당한 재정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노동·사회구조와 조직문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장기간의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은 대규모 재정이 장기간 투입되고 당장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행하려는 의욕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만 부각시킬 뿐 실제로 발 벗고 나서지는 않는 이들에게, 향후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한 사회문제가 될 고령화와 재정위기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복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❶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해법에 대한 국민적 논의 필요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어떻게든 하나로 모아서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은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해결에 중요합니다.

- 우리는 얼마 전 국민연금과 관련한 공론화를 시도했고, 세계 최초로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 이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❷ 삶과 직결한 보건복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

대규모 재정의 배분과 집행 권한을 특정 주체에게 지나치게 집중시키면 결국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국회는 민주적 통제 기구로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재정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며, 국회가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역량을 갖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보건복지재정의 규모와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전망을 독식하거나 통제하려는 재정 관료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수단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❸ 보건복지재정 배분과 집행 시, 투명성 강화 필요

막대한 권한과 재정을 통제하고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보건복지 관련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조차 공개를 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재정 당국과 이해관계 기관 및 단체들은 폐쇄성에 기대어 본인들의 밑바닥 욕망들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요 보건복지재정이 논의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 자료가 적어도 국회에는 투명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법 규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❹ 자체 예산 편성이 가능한 독립적인 저출생·고령화 기구 필요

정부, 특히 재정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저출생·고령화 전담 기구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이들이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재정 당국의 강력한 예산 통제하에서는 어떤 보건복지 정책도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통제 아래서 자체 운영 및 사업 예산의 편성이 가능한 독립적인 전담 기구의 출범이 요구됩니다.
- 아울러 해당 기구를 통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저출생·고령화 해법 모색 공론화를 추진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도록 관련 사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퍼 주는 정부보다 알뜰하게 쓰는 정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창률 교수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질문의 맥락

공적 재원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줄줄 새고 있는 게 아닐까요?

❶ 공적 목적을 수행하는 민간기관들의 거대한 이익집단화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하면 해당 기관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 집단의 저항, 장기 요양기관들의 수익률 보장 요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정부가 공적 목적으로 민간기관을 끌어들일 때 이윤 제어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수익을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부가 공적인 책임을 부여하려 하면 해당 기관들은 이를 당연히 회피하려 들게 됩니다.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할 때 제도 도입이 확정된 상황에서 시설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전국에 걸쳐 6차례 설명회를 열고 요양시설을 열면 1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하였습니다.
- 이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때도 정부는 정권을 막론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공급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갔습니다.
- 민간 기관은 애초에 보장된 수익을 전제로 정책에 참여했기 때문에 공적 책임 요구를 받으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❷ 공적 재원의 통제 미흡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건강보험 예산이 1년에 9조 원 수준이었으나, 20여 년이 지난 현재는 80~90조 원까지 급증한 상황입니다.

- 어제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약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도, 오늘 다른 병원에 가서 동일한 진료를 받으면 다시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중복·과잉 진료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의료수가의 경우 의료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의료기관에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어 공적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데, 정부가 이를 제어하려고 하면 의료계가 강하게 저항합니다. 이러한 저항은 환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 의료계 지원비 총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의료수가의 조정이 어려워 공적 재원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인데, 저출생에 따라 근로 인구가 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익집단화된 공적 성격의 민간기관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2. 해결 방안

국가 재정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공적 성격의 민간기관이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❶ 공적 재정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 강화 필요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기관의 사업들에 대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투입의 적정성, 실효성 등을 확인하는 표준화된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지만 실제로는 공적 재정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 영역의 이해당사자들이 꺼리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서로 양해가 가능한 새로운 표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❷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쓰지 않는 알뜰한 정부

정부는 제한된 국가 예산을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게 집행해야 합니다.

- 사실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정 투자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재정을 집행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어디에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다만, 정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공적 영역에 있는 민간기관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 집행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투명성을 담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AI 기본법 등 신기술 법률에 왜 '온라인으로' 직장인, 재외국민, 청소년, 이동 장애인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나요?

이재흥 상임이사
시민기술네트워크,
시민 참여AI기본법 PM

1. 질문의 맥락

시대 흐름에 발맞춰 국회법을 개정해 주요 법률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상설화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온라인상의 의견 수렴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법률에 대한 의견 제안 및 투표 참여는 나이와 거주 지역,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해야 합니다.

❶ AI기본법의 중요성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개정된 신기술 관련법으로는 유럽연합의 GDPR 발효 이후 제·개정된 '데이터 3법', AI 광풍이 불면서 EU에서 AI 기본법을 승인한 이후 제정된 'AI 기본법'이 있습니다.

- 이러한 법률은 ❶ 사회의 전 부문을 휩쓸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❷ 미래세대(현재의 유아·청소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❸ 어떤 결과, 부작용, 피해가 생겨날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❹ 따라서 논란이 되는 쟁점과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기에,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치지 않으면 의회 표결로 통과되더라도 깊은 사회적 갈등을 낳기 쉽습니다.

❷ AI 기본법 제정 과정의 문제점

AI 기본법은 계엄 사태가 벌어진 와중 시국이 혼란했던 2024년 말에 본회의를 전격적으로 통과해, 1년 후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 21대 국회에서 이미 수많은 의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입법을 했지만, 사회적 논란이 팽팽하게 이어져 끝내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했고 결국 폐기된 바 있습니다.
-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여러 의원이 앞다퉈 발의에 나섰고, 저희 '시민기술네트워크' 또한 최민희 의원과 함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법안을 만들어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 AI 기본법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는 동안 공청회는 오프라인으로 평일 낮에 단 1회 개최되었고, 계엄 때문에 시국이 혼란했던 12월 말에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산업 발전이 시급하다는 여야의 판단에 따라 각종 규제와 인권 보호 조항은 거의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 없이 법안 통과가 진행되었기에, 국회 입법조사처와 학계는 벌써부터 공포 전 재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속속 내고 있습니다. 하위 법령 정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진보넷, 참여연대, 민변 등의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인권 단체는 일제히 AI 기본법에 대한 반발 성명을 내고 법안 내용과 국회를 국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일반 시민들, 특히 이 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미래세대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AI 기본법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고 각자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❸ 시민 목소리 반영 미흡

언론, 기업, 학자, 정책가, NGO 등의 이른바 전문가 및 전문 단체 및 집단에게는 입법과 관련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이 대변해야 할 시민들에게는 그런 수단이 없습니다.

다수의 시민은 날마다 일하는 까닭에 평일 낮에는 국회에 오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재외국민, 지방 거주민,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에게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낼 창구와 방법이 없습니다.

-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현재는 일반 시민도 실시간으로 정당 활동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 토론하며 투표로 참가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입법 제도는 이러한 시대 흐름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법이 공포되고 나서야 뒤늦게 주요 조항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❹ 온라인 공청회 의무화

다행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 온라인 공청회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공청회를 열어야만 그에 병행해서 온라인 공청회를 열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청회만 열 수는 없고, 온라인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 공청회는 민원 창구로 인식되고 있는 '국민신문고'의 한 메뉴에서만 열립니다.

- 현재의 온라인 공청회 시스템에는 숙의와 토론, 법안 문구 제안,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부가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는 플랫폼에는 보안 문제와 행정 제약 사항이 많아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유연한 메뉴 구성과 변경이 어렵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온라인 공청회는 보안 문제와 행정 규정의 제약을 받고, 딱딱한 느낌을 주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의 한 메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민 의견 수렴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공론화 과정에 특화되어 있는 시민 기술 플랫폼 협동조합이나 스타트업과 협력해서 기획하고, 생동감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❶ 온라인 공청회 제도화

온라인 공청회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공청회 의무 개최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특히 미래의 신기술에 대한 법안이나 이를 최초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기본법의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 온라인 공청회를 한시적으로 열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열 수 있게 해야 하고 기간을 최소한 3주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 온라인 공청회가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열리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온라인 공론화나 디지털 민주주의 솔루션에 전문성을 갖춘 플랫폼 협동조합이나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통해서도 공식적인 온라인 공청회가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재외국민, 미성년자도 쉽게 접속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술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법과 규정에 담아내야 합니다.

❷ 프랑스 공론화 사례

세계 최초의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법률로 평가받는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 사례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이 법은 GDPR 발표 직후 데이터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던 2016년에 프랑스가 '공화국을 디지털로 업데이트한다는 의지'로 설계하고 제정한 것입니다.

- 이 법은 민간의 시민 기술(civic tech) 전문 스타트업이 정부와 손을 잡고 민관협력으로 추진했습니다. 정책 제안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 온 협업 경험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 전무후무한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시민들의 참여가 광범위했습니다. 시민들은 법 내용 구성과 작성, 수정에 모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위키(wiki)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업데이트 내용은 개발 공유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 공유되었습니다.
- 당시 이를 주도한 디지털 총괄 수석 악셀 르메르는 '법안 내용의 세세한 수정 과정까지 공유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공론화를 진행하고 시민에게 법안 작성 참여 기회를 제공한 이 법은 장애인, 해외 거주 국민, 미래세대인 청년과 청소년의 참정권을 적극 보장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고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 숙의 과정 중에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외의 '공익 데이터'라는 개념이 새로 생겨나서, 공공기관의 업무 관련 데이터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관련 데이터의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가 보다 널리 공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 데이터에서 제외되었던 법원 판결문 또한 공개 의무화 대상이 되었습니다.
- 공론화 기간 3주 동안의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 수는 13만 7000명, 법안 작성 기여자 수는 2만 1330명, 투표 참여자 수는 14만 7000명, 제안 의견 수는 8501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치는 그에 따른 의회 표결 결과입니다. 하원에서 찬성 356표-반대 1표, 상원에서 찬성 322표-반대 1표라는 놀라운 의견 합치가 이뤄진 것입니다.

❸ 관련 상임위 주도

행정절차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상임위인 과방위 차원에서 우선 추진되는 신기술법을 발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라도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합니다. 이번 최민희 의원과의 협력 사례처럼 온라인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협동조합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시민의 뜻을 반영해야 합니다.

- 이를 테스트 베드로 삼아,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법상의 온라인 공청회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❹ 프랑스 입법 사례 연구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의 PM이었던 전 디지털부 장관 악셀 르메르를 인터뷰하고, 해당 사례를 국회와 정부 입법 담당자들이 함께 연구해야 합니다.

악셀 르메르는 오랜 시간 영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재외국민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크라우드소싱 입법을 힘주어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 프랑스도 디지털공화국법을 추진하고 입법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I 기본법 시행 전에 이에 대해 청취하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구체적인 성공 요인을 배워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AI 경찰 어때요?

이지은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마포구갑
전 경찰공무원

1. 질문의 맥락

4차 산업혁명의 AI 시대, 경찰이 핵심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❶ 새로운 형태의 위험한 범죄 증가

묻지마 폭행, 극우 테러리즘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위험한 범죄 유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큰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❷ 112신고 폭증, 주취자 사건 처리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도 저하

휴대전화 보급으로 112 신고가 폭증하는 가운데, 신고 내용 중에는 타 기관 업무나 단순 서비스 제공 요청도 많은 실정입니다.

야간 시간대 신고 사건의 99% 이상이 주취자 관련 사건인데, 주취자에게는 같은 말을 여러 번 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등 신고 대응 시간이 일반 사건 대비 2~3배 걸려 경찰관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❸ 사회환경 변화 및 국민 요구에 따라 경찰 업무 증가

전의경제 폐지, 각종 특별법 증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의 요청 등으로 경찰 업무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소방, 군 등과 공동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경찰관이 전문화하고 증가하는 업무에 대응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본질적 업무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AI 및 로보틱스를 활용한 경찰 지원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경찰·소방 통합 및 AI 기반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긴급 대응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❶ AI 및 로보틱스 기반 경찰 지원 시스템 도입

AI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특이 사항을 자동으로 알린다면 경찰의 범죄 예방 및 치안 업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현재의 CCTV 분석은 사람이 눈이 빠지게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특이 사항을 발견하면 현장 확인을 하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 CCTV 영상을 충분히 학습한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CCTV를 모니터링한다면 폭력 행위,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상 행위, 차량 절도 행위, 도난·수배 차량의 번호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 등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감지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로봇 경찰은 위험한 상황에서 시민과 경찰관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경찰관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주는 등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두바이의 경우 이미 2017년부터 로봇 경찰을 도입하였습니다.
- 로봇 경찰은 외국인에 대한 통역, 청각장애인 수어 소통, 분실물 신고와 접수 대응, 경찰서 내 민원 응대, 경찰관과 동행 시 현장 촬영과 각종 전문적인 정보 제공 및 응급 환자 바이탈 체크, 음주 여부 및 유독가스 감지, 흉기 난동자에 대한 대응 지원(경고, 시민·경찰 방어 및 보호 등), 공중·수중 수색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현재 부족한 경찰 치안 보조 인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❷ 경찰·소방 통합 및 AI 기반 대응 시스템 도입

국민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112(경찰)와 119(소방) 중 어느 번호로 신고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실제로 경찰과 소방이 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과 같은 단일 긴급 신고 번호(911) 체계를 도입하고 AI 기반 신고 접수 시스템을 활용하여 출동을 자동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범죄, 사고, 재난 등의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대가 동시에 출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예를 들어 자살 신고, 추락 사고, 화재 발생 시 경찰과 소방이 공동 대응해야 함), 119 출동 시에도 경찰이 교통 및 주민 통제를 위해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AI는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적절한 기관(경찰, 소방, 해경, 군 등)에 자동 배분이 가능하므로, AI 기반 자동 판단 및 대응 체계를 도입하여 긴급 신고 접수가 아닌 경우 AI가 초동 판단을 내리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종합적인 대응 능력과 출동 속도가 개선될 것입니다.

❸ 유의해야 할 점

경찰 로봇의 법적 지위와 책임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 경찰 로봇을 장비로 볼 것인지, 경찰관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존재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경찰 로봇이 수행하는 행위에 따른 책임 소재(경찰,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로봇의 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 경찰 로봇이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별 정보 수집 제한과 시민 동의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국가기관 간 정보 공유 제한을 고려하여 경찰 로봇이 특정 업무 내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해킹과 정보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 AI에는 얼굴 인식 기술을 포함, 여전히 정확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AI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❹ 전략: 단계적 도입

규제 영역이 아닌 서비스 영역부터 도입해야 합니다.

- 분실물 신고·회수 및 사건 접수 지원, 주취자 발생 상황 및 응급 상황 지원, 경찰이 신속한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AI 기반 워킹 딕셔너리 등을 제공합니다.

독자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이 아닌 경찰 보조 역할로 시작해야 합니다.

- 수배자·도난 차량 발견 시 경찰 로봇이 즉시 검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자료를 보내어 경찰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가 아닌 제한적 장소에서, 경찰 로봇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AI 기반 CCTV 분석의 경우 일반인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경찰서, 지구대 등 본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 시범 운영 후 확대해 나가고, 초기에는 전자발찌 대상자 감시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요?

김윤태 교수
고려대학교 정치사회학

1. 질문의 맥락

불평등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의 궁극적이자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❶ 민주화 이후 불평등 심화

정치 민주화로 인해 불평등이 커졌다기보다, 정치 민주화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자본주의는 효율적인 경제 제도이지만, 자동적으로 불평등을 줄이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불평등은 노력하려는 동기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불평등의 수준이 지나치면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는 국가가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과 깊이 관련됩니다.

❷ 불평등의 사회적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습니다. 가히 출산 불평등, 죽음 불평등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사회적 신뢰도가 가장 낮고, 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 국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감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100:80 수준이었는데, 2025년에는 100:60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간의 소득 격차도 거의 100:60 수준입니다.

- 파리경제대학에서 발표한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한국에서 상위 1%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전 국민 소득의 약 25%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은 전 국민 소득의 45%가량에 해당합니다.
-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상위 10%의 소득을 받는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 아래에서 상위 10%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 지출국이 되었습니다.
- 입시제도를 대폭 바꾸고 서울대를 수십 개 만든다 해도, 불평등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과잉 경쟁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높은 부동산 가격 또한 입시 경쟁에 따른 지나친 사교육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소득 불평등은 저소득층의 교육 투자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약화시켜 국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노인층과 청년층이 극우 포퓰리즘에 휩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은 은퇴한 노인입니다. 45%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을 기록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 취업난과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청년층의 빈곤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층 사이에서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N포 세대'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 정치 유튜브나 종교 단체에서 소외된 노인층과 청년층에게 심리적 만족감, 정치적 효능감 등을 줄 경우 극단적이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사회적 분열과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관적 계층 의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 1987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7000달러 수준이었고 당시 국민의 80%는 본인이

중산층이라 생각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4만 달러에 도달했지만, 스스로가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50% 정도에 그쳤습니다.

- 우리나라는 고용 보험과 국민 연금 등의 사회 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국가이기에 중산층도 '추락의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 또한 중산층 사이에서는 자녀가 자신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질 것이라고 보는 비관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불안합니다.
-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삶의 만족도가 절대 소득보다 상대 소득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자유 시장의 옹호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한 말입니다.

2010년부터 인터넷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의 불평등이 지나치게 커지면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 청년층은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자녀에게 세습되는 것이 특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부모의 사회적 인맥으로 입시와 취업에 특혜를 제공받는 일을 극히 혐오하며,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에 절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감은 선진국 중 가장 낮고,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청년과 노인의 행복감이 유독 낮습니다. 가히 행복 불평등 사회라 하겠습니다.

- 산업화와 민주화가 성공했는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물질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정신적으로는 실패했다는 역설이 발생했을까요?
-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지나친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국가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❸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평등 여론

OECD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20% 수준이었으며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 이 점이 불평등을 줄이려는 국가에게는 딜레마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국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의 70~80%는 우리나라가 북유럽형 복지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지만,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강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원하는 모순적인 요구는 정치권을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 우리나라 국민은 불평등에 주목하면서도 여전히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률, 대기업이 주도하는 양적 성장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개발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그러한 지표에 주목하기를 강요당했기 때문입니다. 문제 설정과 해결 방안 사이에 놓인 이러한 딜레마는 정부와 정치권에 어려운 숙제를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은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만, 스스로 불평등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우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을 주어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평등 문제에 관한 노력은 정치권의 책임이 큰 영역입니다.

❹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충돌

'1인 1표'의 민주주의와 '1주 1표'의 자본주의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서로 타협하고 균형을 이루며 공존해야 합니다.

- 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의 평등을 추구하나,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므로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만듭니다.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의 질이 나빠지면 결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불평등 민주주의'는 현재 전 세계의 정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의 의회 폭동과 2025년 우리나라의 법원 폭동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 주는 징후입니다.
- 정치의 근본적인 목표는 사회의 경제적 성과가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분배의 정의, 즉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해밀턴 프로젝트〉) 청년 세대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 기업은 본래의 성격상 불평등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는 불평등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이 경제 민주화와 사회 정의를 포기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2. 해결 방안

정치 지도자는 게임의 법칙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경제 제도(혁신 성장)와 사회 제도(포용 국가)의 개혁을 추구해야 합니다.

❶ 경제 제도의 개혁(혁신 성장)

정치인의 공약은 양적 성장보다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선진국 가운데 어떤 나라의 정치인도 성장률 5%, 1인당 국민 소득 5만 달러, 글로벌 대기업 30개 등의 공약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청년 일자리 창출, 빈곤율 절반 감소, 아동 빈곤율 2/3 감소, 과학 기술 투자 두 배 확대 등을 제시합니다.(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민과 관세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는 노동자의 빈곤화와 불평등 증가의 원인을 외국인과 자유 무역 탓으로 돌리는 극우 포퓰리즘이 그릇된 성공을 거둔 결과입니다.)
- 현재 선진국의 진보 정당들은 교육, 직업 훈련, 보건, 임금, 연구 개발(R&D) 투자, 기후 정의, 재생 에너지 비율 등 복지·일자리·기후 공약에 관심이 큽니다.

대기업 지배 구조의 개혁을 통해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통한 2차 분배뿐 아니라 노동 시장을 통한 1차 분배(소득)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큰 만큼 공정 거래법을 보완하는 등의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도록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세계 인권 선언〉)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이 지배하는 구조를 개혁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기업 경영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한다면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재벌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서 개혁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주도하여 노사정 대타협을 모색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 경제 개혁 정책은 기업의 창의성을 키우는 '혁신 성장'을 주도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기업가형 국가'(영국 경제학자 마리아노 마추카도 교수의 아이디어) 모델을 적용해 능동적인 산업 정책을 펴고 선제적인 과학 기술 투자를 중시해야 합니다.
- 미국이 인터넷 산업에서 거둔 성공에는 실리콘 밸리의 벤처 투자자들도 영향을 미쳤지만, 연방 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재생 에너지, 인공 지능, 양자 컴퓨터 등 당장 수익이 나지 않아 기업 투자가 소극적이지만 향후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에 대해 국가가 전략적, 창의적, 실험적인 역할을 맡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❷ 사회 제도의 개혁 (포용 국가)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과 사회 지출 예산 비율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의 위상에 맞게 조세와 복지 수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과 보건 예산은 정부 지출이 아닌 사회 투자임을 정치권이 역설해야 합니다.

- 복지는 단지 빈곤층을 위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공공 부조와 실업 급여에 대한 중산층의 지지가 낮은데, 복지 재원은 모든 국민을 위한 교육과 보건에 우선적으로 쓰이며 이는 곧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선거 공약에서 성장, 복지, 교육 사이의 균형이 이루는 삼각형 구조를 적극적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역사를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공공 부조와 현금 지원보다는 공교육과 보편적 사회 보험이 불평등을 더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 사회 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개인 사업자)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가입율이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덜란드에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지만, 이들은 보편적 사회 보험의 혜택을 받고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얻기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 제도 개혁을 위한 조세 인상은 정치권에 큰 부담이 됩니다. 유럽 정치권에서는 '증세는 정치인의 유언장과 같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인 증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 복지 증진은 지지하지만 증세는 부담스러워하는 중산층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조세 회피 및 탈세 방지 강화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조세 정의를 강조하고 부유층을 시작으로 누진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과 보건 등의 보편적 복지 혜택을 통해 중산층의 지지를 확보해 장기적인 보편 증세를 설득해야 합니다.
- 성공한 복지 국가들의 국민은 정부를 깊이 신뢰합니다.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있도록 투명한 예산 집행, 주민 참여 예산 제도 강화, 감사원 역할 강화 등을 포함한 반부패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❸ 경제 제도와 사회 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 제도의 개혁 추진(합의 민주주의)

현행 대통령제와 단순 다수 대표제(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승자 독식 정치가 등장하고 적대 정치가 격화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에서 불평등을 줄이는 경제 제도를 만들고 사회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고(대통령 결선 투표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회제 등 도입), 선거 제도를 개혁해(비례대표제 확대) 합의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100년 전에는 유럽의 불평등 수준이 미국보다 심각했지만,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이 정치 제도를 개혁하면서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정치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불평등 완화가 어렵습니다.

현재 민주주의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2016년 촛불 혁명과 2024년 빛의 혁명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회 정의와 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대변하는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지혜로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면 노예제와 소년 노동이 폐지되지 못했을 것이고, 8시간 노동제와 단체 교섭권과 공교육이 도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기업이나 개인이 이룬 결과가 아닙니다.
- 정상배는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소확행을 추구하는 공약도 필요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드러내는 공약도 필요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포용 성장, 복지 국가, 기후 정의를 실현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기본 사회'가 혁신과 도약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요?

은민수 교수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1. 질문의 맥락

민주주의의 퇴행을 건강한 민주주의로 복원하고,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방법으로서 모든 국민이 고르게 안전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사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❶ 민주주의 퇴행

통상 민주주의 퇴행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행동에 의해 민주주의 제도, 규칙, 규범이 점진적으로 잠식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 민주주의 퇴행의 환경적 조건은 강한 부정적 당파성과 정치적(정서적) 양극화입니다.
- 당파성과 양극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양극화된 민주주의 국가의 유권자들은 '당파적 이익 수호가 최우선이고, 그다음이 민주주의'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❷ 경제적 불안이 민주주의 퇴행 초래

경제 침체, 소득 및 자산 불평등, 고용 불안 및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연결됩니다.

- 유럽에서의 극우 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 민주주의는 보통의 사람들이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하며, 시민으로서의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확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 민주 정부가 사회경제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를 향한 지지의 기반도 그만큼 약화되는 것입니다.

❸ 저소득-고위험의 '불안 동맹'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과 고위험 간의 불안 동맹이 비민주적 정치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민주주의 퇴행을 건강한 민주주의로 복원하고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방법은, 모든 국민이 고르게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돌봄, 보건의료, 소득, 교육, 주거, 교통과 에너지, 일자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소망을 실현토록 하는 것입니다.

❹ 능력주의 극복이 가장 큰 딜레마

공정한 사회의 이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을 선물하고, 패자에게 엄청난 굴욕을 안깁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능력주의가 인간의 가치를 시장 가치로 환원하고, 교육을 왜곡하며, 공동체 의식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❺ 협력이 필요한 시대

협력, 연대, 공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종국적으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에드워드 윌슨에 따르면 집단 내에서는 이기주의가 이타주의를 이기지만, 집단 간에서는 이타적인 집단이 이기적인 집단을 이깁니다.
- 내가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역지사지와 측은지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계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어떤 문제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여 불안과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이 시대에는 반드시 협력이 필요합니다.

2. 해결 방안

'기본 사회'는 시민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전성과 기회를 제공하여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보편적 기본 서비스'와 '혁신적 소득 보장'을 핵심으로 두고 구성한 포용적인 사회정책을 경제정책과 결합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❶ 기본 사회 구축 필요

현재의 민주주의 퇴행을 건강한 민주주의로 복원하고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른바 '기본 사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 기본 사회란 시민에게 안전을 충분히 제공하여 각자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꿈꾸는 대로 도약이 가능한 사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민주주의 위기,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 보편화, 5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자살률 및 노인 빈곤율 상승 등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전환기입니다. 이제는 낡은 경제·사회 모델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 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본 사회입니다. 기본 사회가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협력과 연대에 기반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면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❷ 기본 사회의 핵심은 보편적 기본 서비스와 혁신적 소득 보장

기본 사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종착점이 아니라 그다음의 도약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 에베레스트산을 오를 때 머무는 베이스캠프, 뜀틀을 넘기 전에 밟는 구름판,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한 기초체력 등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사회입니다.
- 기본 사회 정책은 보다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로서, 사회 구성원이 실패를 겪더라도 재충전을 통해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본 사회 정책은 추가적인 법의 제·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제34조 등 법적 근거와 기반이 충분합니다.

기본 사회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와 혁신적 소득 보장을 결합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면서도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사회입니다.

-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영국 노동당이 제안한 개념으로, 의료·돌봄·주거·교통·에너지 등의 필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전 국민 기본 소득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혁신적 소득 보장은 아동수당·기초연금·청년수당 등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사회 수당과, 근로 연령층(20~65세) 중 노동 참여 의사가 있는 실업자와 저소득 취업자에게 생활 소득 보충의 의미로 지급하는 노동 참여 소득을 보장한다는 개념입니다. 노동 참여 소득 지급은 독일(숄츠 연립정부)과 프랑스(마크롱 정부)에서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 기본 사회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강화하여 모두가 당당하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추구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을 알고 있으면서 왜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나요?

조돈문 이사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 질문의 맥락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❶ 소득 불평등 심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 정도를 차지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재벌 그룹 대기업 중심의 이윤 주도 성장 전략이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 중심 정책에 의존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낮은 이윤율과 노동자의 저임금으로 내수 시장이 위축되면서 경제적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❷ 비정규직 문제

임금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이들은 평균 임금은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퇴직금, 사회보험, 복지 혜택 등이 부족하여 경제적 불안정성을 안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과 청년층이 특히 불리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불안정으로 미래가 불확실해 편안하게 소비할 수 없고,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기업은 채용·해고를 마음대로 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하지만,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고착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 복지, 처우에 있어 차이가 극심합니다. 정규직은 고용 보호를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언제든 해고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❹ 중소기업의 낮은 이윤율과 비정규직 활용

중소기업이 기술력 강화보다는 인건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 하면서 저임금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윤율 격차가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도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❺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 정책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 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상징이었던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직접고용 전환율은 2%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자회사에 고용되었는데, 자회사 고용은 불법파견의 소지가 큰 간접고용입니다. 자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본사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제공받지 못했고,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 시장 자본의 반발이 심해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존재합니다.

2. 해결 방안

정부는 노동시장 차원에서 고용을 보장하고 비정규직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노동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 시장 자본과 기존 정규직이 부당한 저항을 한다면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를 지녀야

합니다.

❶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필요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생산방식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들이 등장하며 다양한 형태의 종속성을 지닌 노동자 유형들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은 전통적 노동자를 위해 설계된 현행 노동법 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개념 정의를 확대하여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이는 고용관계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입장에도 부합합니다.(이용우 의원 등이 2024년 6월 공동발의한 법률안 참조)
-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안을 두 차례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되었습니다. 제2조의 근로자 개념 정의 확대를 포함하여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❷ 노동시장 차원의 고용 보장 개혁 필요

기업 단위의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되, 기업에서 해고되더라도 신속하게 다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차원에서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업종의 축소나 소멸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노동자들이 다른 업종이나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고용 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소득 보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보험제도를 확충하여 노동자가 한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고, 비용 부담 걱정 없이 직업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다시 말해, 현행과 같은 개별 사업장 수준의 직장 보장 방식이 아닌 전체 노동시장 차원의 취업 보장 방식으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 필요

비정규직을 비용 절감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고용하는 대신 시장 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제한적 사유로만 고용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동등 처우 원칙을 적용하여 기업이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생산현장 차별 처우 금지에 대한 철저한 감독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규직 오·남용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❹ 산별 교섭 제도화 필요

산업 구조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기업별 단위의 고용 보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 단위에서 고용 보장을 논의해야 합니다.

- 산업별 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동과 자본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아울러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여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더 많은 노동자가 초기업 수준의 단체협약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활용하지 않고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❺ 정부 정책 실행력 강화

정책 실행 과정에서 시장 자본의 저항을 돌파할 정치적 의지와 정규직-비정규직의 갈등을 최소화할 정책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 산업 발전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산업 및 업종별 노·사·정 협의를 활성화하고, 노동과 자본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야 합니다.
-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조선소는 왜 최저임금만 주나요?

천현우 조선소 노동자
「쇳밥일지」 저자

1. 질문의 맥락

문제는 하청 노동자입니다. 핵심은 임금격차입니다.

❶ 조선소 임금구조 개편

저는 현재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최근 반등했지만, 내국인 신규 노동자가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청이 채용공고를 내면 여전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 문제는 하청 노동자입니다. 조선소에서는 기술 교육원을 통해 계속해서 하청 노동자를 유치하려 하지만, 대부분 얼마 못 가 그만두고 맙니다. 원청 노동자라고 하여 더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 핵심은 임금격차입니다. 새로 고용된 하청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고, 이 임금이 몇 년 동안 유지될지 알지 못합니다.
- 조선소에서 극한 파업을 벌였던 유최안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의 경우 22년 경력의 용접사임에도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유 지회장의 경우가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조선소의 하청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❷ 조선소 인재 충원

크게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작게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소엔 더 많은 인재가 들어와야 하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임금구조가 이를 막고 있습니다.

-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액 가운데 83.5%가 제조업에서 나왔습니다. 제조업은 이윤이 많이 남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쟁력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조선업은 종사자 수가 최대치에 이르렀던 2014년을 기준으로 20만 명이 넘는 막대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❸ 조선소 고용의 다양화

조선소의 고용은 내국인 원청 노동자, 내국인 하청 노동자의 형태로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 첫째,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내국인 노동자가 고용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되고 있으며, 이는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 억제 요소로 작용합니다.
- 둘째, '물량팀'이라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합니다. 조선소의 숙련 노동자들은 물량팀으로 빠지는데, 이들은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이 간단한 물량팀이 기업 밖에 존재하므로 기업은 숙련 노동자를 양성하길 꺼립니다.
- 수주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선 외국인 노동자와 물량팀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급히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대처가 미래 인재에게 주어져야 할 공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임금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❶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조선소의 노동자들이 적당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숙련 수준을 임금에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청 노동자는 시작점에서부터 높은 임금을 받고, 미래에 임금이 어떻게 될지 대강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에서 시작되고, 10년 뒤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구조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숙련 노동자가 되면 임금을 올려주겠다'입니다. 즉, 처음엔 임금이 낮아도 기술력에 따라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를 받는 것입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숙련 수준이 임금에 반영될지 그렇지 않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 채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선소에 사람이 오지 않고, 오더라도 얼마 못 가 그만두는 이유입니다.

❷ 시급한 문제 해결

정책 전문가가 아니기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한화오션이 하청 노조와 협상 타결부터 이루는 게 맞습니다.

한화오션과 노동조합 간의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면 다른 조선소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 현재 한화오션에선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매일 출근 시위를 합니다. 노조가 원하는 요구조건은 상용직 고용 확대 및 상여금 300% 지급입니다.
- 조선소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대부분 하루에 9시간씩 일합니다. 상여금 300%를 적용해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34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습니다. 애초에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상여금 300%를 받고 있었습니다만, 이걸 2015년에 없앤 겁니다.
- 이를 복원하면 비로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돌봄 문제 해결 없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요?

송다영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질문의 맥락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높였는데, 하한액도 현행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높여서 저소득층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❶ 일·가정 양립 문제와 국가의 미흡한 대처

우리 사회에 맞벌이 부부가 등장한 이후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 '누가 돌봄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국가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1997년 IMF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밖에 나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을 지켰던 사회 구조가 맞벌이 부부의 사회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❷ 남성과 여성의 가사·돌봄 노동 불균형

우리나라에 여전히 남아 있는 가부장제 문화 때문에, 결혼한 여성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도 집에 와서 아이 돌봄과 가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2019년 생활 시간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시간은 3시간 10분, 남성은 48분입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4배가 넘는 시간을 가사 노동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밖에서 하는 유급 노동과 돌봄 및 집안일이라는 무급 노동을 합치면 여성은 하루 평균 500분, 남성은 466분 정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굉장히 벅차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남성의 유급 노동시간이 너무 긴 것도 문제인데, 이는 긴 노동시간이 회사에 대한 헌신이라고 보는 잘못된 직장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이 유급 노동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 결과적으로 밖에 나가 일을 하고 나서도 독박 육아까지 하는 상황에 내몰린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출산 파업'을 선택했고, 이러한 현상은 2002년부터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❸ 육아휴직 제도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현행 육아휴직 제도의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만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낼 수 있음에도,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남성들은 조직 문화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고,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가 많은 여성의 경우 고용 보험 수급 조건(지난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 보험액 납부)을 갖추지 못해 휴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는 너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❹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 돈(가계 수입) 문제

2024년 6월 19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당초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 신청 유인 효과가 커졌으나, 하한액 기준은 70만 원으로 변함이 없어 저소득자의 참여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 1988년에 도입된 초기 육아휴직은 무급 휴직이었고, 2007년에는 5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생계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2017년 9월에 최고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인상된 후로 8년 동안 정체되었다

가, 2015년부터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되었습니다.

- 현재 20~30대가 받는 월 급여가 400만 원 수준이라고 봤을 때, 당초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육아휴직 유인 효과를 크게 높인 조처라 할 것입니다.
-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월 500만 원의 휴직 급여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월 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하한액을 받게 되는 저소득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로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휴직 급여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2. 해결 방안

중단되지 않는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은 '돌봄'이고 '일·가정 양립'입니다.

❶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을 현행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

육아휴직 제도는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일·가정 양립을 누리게 해 주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기준을 250만 원이라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높인 만큼, 하한액 기준 역시 150만 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저소득층 국민들도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 아울러 부모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체계를 연계·정비함으로써 출산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 모든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할 수 있게 하고, 출산한 여성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❷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육아휴직 하한액 증액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추진하는 데에는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고용 보험을 통한 당장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특별 회계 등을 활용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 연금 개혁 논의를 했던 것처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의무 사용제' 도입에 대해서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❸ 차기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

현 정부의 정책은 중산층·정규직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이 확대되었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 차기 정부는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을 위한 육아휴직 하한액 증액 및 특별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모든 부모가 차별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대전환! 100세 사회를 위한 플랫폼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병두 회장
뉴스투데이

1. 질문의 맥락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 정부는 100세 사회를 위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나요?

❶ 100세 사회를 위한 플랫폼 부재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

수백만 명의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 사회에 쏟아져 나와 있는데, 이들은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없고 밖에 나가면 갈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개인에게는 불행한 삶이 되고, 국가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전체의 50% 이상이며, 연간 소득이 대략 1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절반을 넘습니다.
- 노인 빈곤율이 높으니 결과적으로 노인 자살률 역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한 뒤인 65세 이후의 삶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플랫폼을 바꿔야 합니다.

- 노인들이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며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현역으로 활동하며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❷ 건강·행복·경제 수명(65세)과 평균 수명(84세)의 간격이 가장 큰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행복·경제 수명은 65세이고 평균 수명은 84세인데, 이 간격을 줄이고 건강·행복·경제 수명을 늘리는 것이 국가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 건강·행복·경제 수명과 평균 수명 사이의 기간에는 대부분 불행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수명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그러나 어느 정부, 어느 정당도 이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목표를 제시하고 적정한 정책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100세 사회를 대비해야 합니다.
- '9988234'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3일만 고생하다 죽을 수 있는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은퇴 이후의 삶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곧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평생 학습·활동·행복을 보장하는 국가적 플랫폼을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❶ 경로당을 평생 대학으로 전환

은퇴 이후의 평생 교육은 경쟁에서 이기고 먹고사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평생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기존 경로당은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고, 시니어 대학과 평생 대학원은 대학교의 부속물처럼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급감으로 10년 이내에 수많은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해당 학교를 노인들의 배움 및 활동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유로운 교육 및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 폐교되는 초·중·고등학교 중 일부를 평생 대학으로 전환하면 지역마다 평생 대학을 둘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아침에 쉽게 등교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애교심을 가질 수 있는 평생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❷ 밀폐형 양로원을 마을형 에이지 커뮤니티로 전환

기존 양로원 등 요양 시설에 존재하는 활동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유럽형 마을 기반 요양 시설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역시 폐교되는 학교를 활용하고, 평생 대학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시설에서 고령화 초기·중기·말기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연계형 활동을 진행하면 고령자 개인은 건강과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국가와 자녀 세대는 고령자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❸ 기초 노령 연금의 시대에서 평생 활동의 시대로 전환

노인들에게 시장형 미니잡(mini jobs)을 제공하고 평생 활동을 지원해 국가의 큰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 현재도 기초 노령 연금에 많은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상황인데, 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가는 시간이 갈수록 기초 노령 연금을 지급하는 데 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노인들이 기초 노령 연금에만 의지하지 않고 한 달에 30~4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일주일에 몇 시간씩 근무하는 시장형 일자리(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형 일자리 외의 것)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아울러 자원 봉사 등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늙은 나는 이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졌다. 가정에서도 외톨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사회적으로 여전히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노인들이 보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앱을 통해 은퇴한 인력이 청소년,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해 주는 'K-멘토 프로젝트', 은퇴한 금융 전문가나 기업인 등이 교육을 진행하는 '청소년 경제 학교', 시니어 합창단·오케스트라·패션쇼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는데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강경훈 교수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1. 질문의 맥락

정치권과 정부는 언제까지 '주택 가격을 잡자니 유주택자 표가 떨어지고, 주택 가격 상승을 허용하자니 무주택자 표가 떨어진다'며 표 계산만 하고 있을 건가요?

❶ 심각한 저출산 현상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는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3분의 1 정도 줄어들게 되는 심각한 수치입니다.

- 합계 출산율이 0.72명인 사회에 100명의 남녀가 있다고 가정할 때, 자식 세대의 수는 35명 정도로 줄어들고 손자 세대의 수는 13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❷ 경제 문제는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

저출산 현상을 막기 위해 역대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여러 정책을 내놓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 주택과 관련한 가계부채 문제가 저출산의 가장 큰 경제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유주택자는 주택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지만, 무주택자는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를 경우 주택을 살 수 없게 된다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 통상 유주택자는 중장년층 이상이고 무주택자는 청년층이므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인데도, 유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과 정부는 명쾌한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경제적 위험성이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경제 외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저출산이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❶ 정부의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주는 것이 급선무

주택 가격이 불안정하고 가계부채가 과중한 상황에서, 특히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 등의 안정적인 인생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 현재 청년층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 벼락 거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언제쯤 결혼을 하고 언제쯤 아이를 낳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 '영끌'을 해도 주택을 사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을 생각할 수 없고, 결혼을 한 사람은 가계부채를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 낳을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은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는 특히 청년층의 극심한 경제적 불안을 야기합니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❷ 주택 가격 하락 허용과 과도한 부채 문제 해결 필요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부양책이나 지나친 규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시장 경제 내의 자연스러운 구조적 조정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적 불안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경제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다가도 한 번씩 터지거나 해소되는 메커니즘을 보이는데, 대한민국의 주택시장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음에도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 저출산에 의한 급격한 인구 조정은 주택 가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 가계부채가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구조 조정 없이 방치한다면 특정 시점에 정부의 재정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전체에 매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임대 주택을 포함한 주택 공급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주택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정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미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주택 가격이 폭락했을 때 신속하게 혹독한 수준의 구조 조정을 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빠르게 반등시켰고 경제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작은 방송사와 제작사, 비인기 장르 콘텐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방송의 다양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할까요?

강신규 책임연구위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질문의 맥락

우리나라 방송 산업의 위기와 그에 따른 방송의 다양성 축소를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하나요?

❶ 방송 산업의 위기

방송 제작비와 구매비는 상승하는 반면 방송 사업 매출액과 방송 광고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고, 유료 방송 가입자 수는 정체된 상황이며, 유료 방송 VOD 매출은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송 산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 이는 경기 침체, 다양한 플레이어의 방송 산업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 가처분 소득 감소 및 소비의 분극화·양극화, 지역 소멸 가속화, 낡은 규제 지속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 작용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❷ 방송의 다양성 축소

더 큰 문제는 방송 산업의 위기가 방송의 다양성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방송의 다양성이란 '다양한 창작자 및 제작자가, 다양한 작품에 다양함을 담아,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방송과 OTT 시장에서 글로벌 플랫폼(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등) 중심의 자본 논리가 강화되면서 수익성 높은 특정 장르에 콘텐츠가 집중되는 실정입니다.
- 작은 방송사, 작은 제작사, 비인기 장르(다큐멘터리, 실험적 콘텐츠 등)는 설 자리를 잃고 있으며, 다채로운 목소리를 담는 미디어 환경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❸ 방송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방송의 다양성은 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 문화 그리고 정치적 입장까지 반영합니다.

- 특정한 주류 콘텐츠나 소수의 제작자만이 방송 시장을 장악할 경우 사회 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적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❹ '콘텐츠 다양성 확보'와 '수익성 극대화' 간 딜레마 존재

수익성 높은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려면 산업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거나 정책적 개입과 공적 지원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 문제는 당분간 방송 산업이 성장세로 돌아서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미디어 지원을 위한 주요 재원이었던 기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새로운 지원 재원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2. 해결 방안

정부·공공 기관의 홍보성 캠페인 재원을 활용해 중소 미디어·제작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❶ 중소 플레이어들을 위한 실질적 재원 마련

광고, 투자 등 외부 자원 투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최근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의 홍보성 캠페인들이 미디어의 주요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재원을 미디어의 다양성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❷ 단기적·장기적 추진 전략

단기적: 중소 미디어 기업·제작사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재원은 중소 미디어 기업·제작사의 경영 여건 개선, 제작·유통 구조 개선,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인력 양성 및 교육, 신기술 활용, 기타 조사·연구 등에 투입해야 합니다.

장기적: 중소 미디어 기업·제작사들의 다양성 확보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적·정책적 틀을 확립해야 합니다.

지역 단절·통행 방해·소음공해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 온 지상 철도 지역 시민들, 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도시 대개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재민 소장
한국도시정책연구소

1. 질문의 맥락

철도 지하화의 근거가 되는 법도 마련되었고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었는데, 이제는 슬럼화된 지상 철도 구간과 인접 지역에 대한 혁신적인 대개조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❶ 지상 철도 역기능의 사회적 이슈 부각

철도 지하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현재, 오랜 시간 단절된 도시 공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통합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수도권의 도시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토지 가치가 상승하면서 지상 철도 인근 지역까지 주거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특히 지상 철도 주변 지역은 지역 단절, 통행 방해, 소음공해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주거 환경 및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 주택 가격이 폭등한 서울은 젊은 세대의 노고존(No-Go Zone, 개인 혹은 집단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더해 원도심이 낙후되고,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도시 대개조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❷ 노후 지상 철도 인프라의 기능 개선을 넘어 도시 공간 혁신

국회는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개발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 지상 철도 인프라는 그간 사람과 물자의 대량 수송 수단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도시 공간 재창조 및 지역 대개조의 동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❸ 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한 해결 과제 산적

철도 지하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철도 지하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신규 철도 건설 또는 지방균형발전 정책 사업에 투입되는 것보다 정책적 효율성·효과성이 높은지 점검해야 합니다.(예: GTX 건설 사업비와 철도 지하화 사업비 간 비교)
- 대규모 SOC 개발은 지역 양극화를 초래하고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철도 지하화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도시의 개발 방향이 집중 개발인가 또는 균형 개발인가에 따라 선도 사업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 및 사업의 현실성 등이 반영되어야 하고, 터널형과 데크형 건설 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추진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 지하에 철도 시설을 구축하면 더 이상 확장하기가 어려우므로, 장래에 변화할 환경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해결 방안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시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진행이 원활하고 효과성이 큰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 공간 재창조를 통한 혁신적인 도시 대개조를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❶ 철도 지하화를 도시 'Recovery Project'로 추진

철도 지하화 사업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시 Recovery(회복·복구·회수) Project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회복'은 도시 불균형 해소(낙후지역 회복), '복구'는 철도로 인한 지역 단절 해소, '회수'는 기피 시설(주차장, 정비소 등) 회수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 지상 공간은 휴식·주거·쇼핑·업무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어 시민에게 돌려주고, 지하 공간은 공공성을 확보하여 시민을 위한 복지 공간(예: B1- 주민 편의시설, B2- 기피 시설 회수, B3- 물류창고·스마트팜 등)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❷ 민간 사업자의 참여 확대 및 정부·지자체의 노력 필요

지상 공간 및 주변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고밀도·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을 보장하여 사업 참여 확대를 꾀해야 합니다.

-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결합 건축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변 부지를 포함하는 대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여 낙후된 지역을 대개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합리적인 사업비 분담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철도 지하화를 통한 직접적인 편익은 지상 철도 지역 인근 주민에게 제공되므로, 지자체의 사업비 협조와 지원(재정 투자, 기피 시설 부지 매각 등을 통한 사업 초기 부담 경감)이 필요합니다.
- 현행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상부 개발 수익과 지자체의 부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범위 내에서 법과 제도(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등)를 개선해 국비 지원도 검토해야 합니다.
- 지상 공간의 개발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하 공간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지하 공간 복합 개발(언더 시티)이 안정적으로 가능한 사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철도 지하화 사업의 수익성, 완결성, 원활성이 보장된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사업 확대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❸ 철도 지하화를 위한 효율적 사업 모델 개발

지역 특성과 노선 길이를 고려한 사업 유형 적용 방식, 기존 철도망 계획과의 연계 방안 등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철도 지하화 사업 유형에는 지하터널을 통해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 터널형 방식과 지상 철도를 인공 부지 또는 인공 구조물로 덮는 데크형 방식이 있으며, 지역 특성이나 노선 길이를 고려하여 두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철도망 계획·도시 철도망 계획 등 다양한 철도망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하 공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공용 노선을 활용하는 등 기존 철도망 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 철도 시설을 지하에 구축할 경우 준공 후에는 시설물 확장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향후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적정 규모의 철도 지하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는 현행 입시제도에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면 AI와 극단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요?

권정민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1. 질문의 맥락

AI 기술의 발전과 기술의 보편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인데, 이에 대한 공교육 및 정책의 대응이 미흡해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에서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❶ 청소년의 심각한 극단주의화

요즘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통해 극단주의 사상에 쉽게 노출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등의 인터넷 환경이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놀이와 대화의 부재로 혐오와 배제의 문화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추세입니다. 혐오와 배제는 학교 내 권력 관계의 바탕이 되며, 또래 집단의 압력(peer pressure)이 극단적 사고방식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정 집단(성별, 정치적 입장, 경제적 계층 등에 따라 구분)에 대한 적대감 조성이 심화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적 가치가 훼손되고 사회의 불안정성이 증폭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❷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기술의 민주화와 사회의 부적응

정보가 누구에게나 쉽게 전달되면서 모든 개인이 기술을 통해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기술을 악용하는 집단이 등장해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공신력 있는 언론보다 더 신뢰받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가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정보의 왜곡과 혼란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 문제는 공교육 및 공적 시스템이 이러한 혼란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❸ 공교육과 정책의 한계

현재 공교육의 범위에서는 인터넷 중독 예방 수준의 정책(인터넷 중독 검사 등)만 시행 중입니다. 정작 중요한 알고리즘 이해 교육과 비판적 사고 교육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 기존 교육 정책은 단기적·표면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왔기에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나치게 경쟁적인 입시제도하에서는 민주 시민성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 사이에서 극단주의가 확산되는 현상이 점차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기술의 민주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되려면 공교육 개혁, AI·미디어 환경 개선, 가족·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❶ 공교육 지원을 통한 청소년 극단주의 대응

비판적 사고 및 알고리즘 이해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유튜브·SNS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확증 편향을 경계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 기존의 형식적인 인터넷 중독 검사는 폐지하고, 현재 기술 발전의 수준에 맞추어 AI 및 정보 검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래 문화 개선을 위한 놀이 및 사회적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 청소년들이 건강한 또래 문화를 형성하도록 다양한 대화와 놀이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과 공존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 아울러 스포츠·예술·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여 비극단적 관계 형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❷ AI 및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제도적 대응

알고리즘 투명성 자율 공시제를 도입합니다.

- 정부와 민간(플랫폼 기업, 전문가 단체 등)이 알고리즘 운용에 대한 표준화된 공시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플랫폼에게 투명성 인증 마크 등을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 강제적 의무화를 지양하되, 투명성 공시를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홍보 지원, 우수 사례 표창 등)를 제공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설명 책임을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민관 협력 알고리즘 모니터링 기구를 설립합니다.

- 플랫폼 기업, 청소년 단체, 전문가(기술·언론·사회학 등)로 구성된 자율 모니터링 기구를 두어, 플랫폼 측에 정기적으로 알고리즘 개선 경과와 데이터 등을 요구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 이 기구는 정부 산하에 두기보다는 민관 협력 방식을 취해 기업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모니터링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객관적 지표 분석을 통해 극단주의 콘텐츠 추천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❸ 가족·사회적 차원의 대응

부모와 교사를 위한 교육 및 가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부모가 자녀의 극단적 사고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교사가 교내의 혐오와 배제 문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부모 및 교사와 청소년들 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극단주의의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논리적 토론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극단적 사고에 반론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10년 뒤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공교육 시스템 이대로 괜찮을까요?

홍인기 교사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

1. 질문의 맥락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고 학습에 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교실에 방치되어 있는데, 정부 당국은 왜 아무 대책 없이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 할까요?

❶ 학령인구 감소 문제 심각

앞으로 5년 이내에 초등학생 수가 31% 정도 감소합니다.

- 2025년에도 초등학생 수가 14만 3000명 감소했고, 경기도에서만 3만 5000명이 감소했습니다.
-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는 17만 명이 감소하는데, 이는 부산과 대전의 초등학생 수를 합친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아울러 향후 10년 이내에 현재의 50%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이 사라지게 됩니다.

❷ 학생 수 감소와 지역 불균형 심화

통계청이 2024년 5월 28일 자로 발표한 시도별 학령인구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초등학생 인구가 비수도권의 초등학생 인구보다 많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인구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2022년 발표 자료에서는 2025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일이 한 해 앞서 발생했습니다.

- 지방의 경우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군청 소재지의 학교로 학생들이 집중되고 있고, 그 외의 학교는 폐교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폐교 사례는 수도권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1기 신도시에 거주하던 젊은 부부가 아기를 가지면 집값 상승 등의 문제 때문에 김포, 파주 등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기 신도시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향후 10년 이내에 초등학생 수가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서울이 포함됩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특히 울산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❸ 학생 수 급감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

초등학생 수의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교육행정 시스템은 대비책 없이 예전 방식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 현행 시스템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이는 머지않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 2019년 통계청 자료를 통해 10년 후 학생 수가 40% 이상 감소할 것을 예측했으면서도 정부는 대책을 내지 않았습니다.
- 관료 조직의 특징은 '당장 내리는 비를 피하자'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어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의 통상적인 첫 대응은 관련 데이터를 숨기는 것입니다.
- 학생 수 급감이 예상되었다면 이를 고려한 교대 입학정원 조정, 기존 교사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정부는 2027년까지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15.9명으로 낮추겠다는 계획만 발표했을 뿐, 어려운 일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는 단 한 번도 한 학급에서 몇 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정부가 미래의 자원을 손쉽게 당겨서 써 버렸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❹ 학습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없는 학교

난독증 등의 학습장애를 겪는 학생을 포함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발견과 진단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전체 학생의 2.1%입니다. OECD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호주로,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은 18.8%입니다. 미국 공립학교의 난독증 학생 비율은 전체의 4.8%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난독증 학생 비율은 0.02%로 조사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기초 학습 부진의 원인은 대부분 난독증 등의 학습장애인데, 정부는 이를 단순한 기초 학습 부진으로 간주하고 아무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경우 한 학년(약 60명)에 언어치료사가 한 명씩 배치되어 학습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로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은 전체의 약 5% 정도이고,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어 이른바 느린 학습자라 불리는 학생은 12~13% 정도입니다. 한 반에 있는 20명의 학생 가운데 3~4명에게는 교사가 교대에서 배운 지식으로 실질적인 학습을 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 해결 방안

학생 수가 절반으로 감소한 시대를 대비하는 공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❶ 교사 인력의 전문적 역할 확대

교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돌봄 확대, 특수교육 수행 등을 통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맞도록 학교와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 과거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오후 3시 하교제'를 참고하여 오후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 전문 교사의 수업을 진행해 학교에서 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난독증 등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어치료사 훈련을 받은 교사가 세심하게 맞춤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쪽이라 불리는 ADHD 학생이나 품행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고 이들에게 맞는 생활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행동 중재가 가능한 정서 행동 지원 전문 교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❷ 교사들의 자발적 역할 확대와 국민 설득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도록 교사들과 국민 사이의, 교사와 교사 사이의 공론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 교사들은 '교사의 수를 유지하는 대신 교사들의 역할을 확대하여 학교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 교사들 사이에서는 기존 정규직 교사의 규모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과거 불을 끄는 역할을 수행하던 소방서가 119 구급대로서 다양한 역할을 확대 수행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인원을 증원했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❸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계·학부모·교사·정부가 교육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 정부는 모든 데이터를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 형식(CSV 파일 등)으로 제공함으로써 각종 데이터가 연구 및 정책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데이터 기반의 논리적 해결책 및 정책을 마련하여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하는 변화된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지금처럼 주입식 교육으로 배워도 되는 걸까요?

김승일 대표
모두의연구소

1. 질문의 맥락

정해진 답을 맞히는 시험만 강조하는 현행 교육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생성형 AI의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는 시민을 길러 낼 수 있을까요?

❶ AI와 인간의 역할이 뒤바뀔 위험에 직면

AI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정답 중심의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존에는 컴퓨터가 정답이 있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역할을 했지만,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로는 답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를 기반에 두고 어떤 문제에도 그럴듯한 의견을 생성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 반면, 현재 우리의 교육은 정해진 답을 맞히는 시험을 통해 학습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❷ 사회 전체의 낮은 신뢰 수준

정답을 요구하는 현행 평가 제도는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가 부족해 평가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 주관식 또는 토론 시험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평가받는 사람은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이 내놓는 평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그 결과 공정성만을 담보하는 현재의 시험 제도가 정착된 것인데, 생성형 AI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이와 같은 평가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❸ 실력보다 스펙을 중시하는 사회적 문화

자격증이나 스펙이 미흡하더라도 해당 직무에 대한 역량과 실력을 갖췄다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의 평가 중에서 가장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루어지는 평가는 대학 입시입니다. 이 평가는 공정성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정해진 답을 맞히는 능력만을 키우게 되었고, 출신 대학은 그저 자격이나 스펙 중 하나로 취급받는 실정입니다.
- 대학이 '고등학교 졸업 후 자격이나 스펙을 만드는 곳'이 아닌 '나이와는 상관없이 언제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키워 나가는 곳'으로 바뀔 시점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개개인은 역량과 실력을 갖추고, 우리 사회는 각자의 역량과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생성형 AI 시대의 교육과 인재 양성 방식은 기존의 스펙 중심,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가 시스템 및 교육 방식의 혁신, 대학 및 공교육의 변화,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합니다.

❶ 스펙이 아닌 실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 구축

평가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감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평가자는 학생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자에 대한 교육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 채용 시 학위나 특정 스펙에 따른 지원 제한을 두는 대신, 지원자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❷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방식의 혁신

정답을 암기하게 하는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 AI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AI로부터 어떤 답을 끌어낼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맥락까지 설정하여 요청하는 능력', '상상하는 힘'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 교육자들은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갖추려면 교육자들이 새로운 방식의 학습법을 체득해야 하고, 교육 프로그램 또한 이를 반영하여 변화해야 합니다.

❸ 대학 및 공교육의 역할 변화

대학은 정해진 커리큘럼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상상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창의적 교육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 교육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려면 '교육 샌드박스'를 운영하여 교육 벤처 기업과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교육 방식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되, 이를 5~10년간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교육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❹ AI 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자원 개방형 인프라 조성

핵심 AI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 및 기관 연구자들에게 놀이터이자 연구 환경이 될 만한 공간을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

- 기존의 연구 환경은 기관 중심으로 폐쇄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개발하고 연구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GPU 제공 등),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 협력적 촉진자(퍼실리테이터) 모델을 통해,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학습자들끼리 토론하고 실습하는 방식의 교육 및 연구 문화를 확대해야 합니다.
- 정부는 기업과 협력하여 AI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AI 인재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획일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까?

김현수 임상교수
명지병원

1. 질문의 맥락

학교 안팎 어디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대한민국의 획일적인 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❶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학교 교육 문제

획일적인 경쟁을 계속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큰 정신적인 상처를 입히며, 질병을 유발합니다.

- 혁신학교 등장 이후 많은 변화가 생기기는 했지만, 여전한 입시제도와 경쟁을 기초로 하는 교육 제도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성적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줄을 서야 하는 획일적인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병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❷ 존중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모든 청소년은 존중받고 싶어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체제하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 모든 청소년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각자의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의 국·영·수 중심 교육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1등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교육 체제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패배했다는 느낌, 높은 서열에 들지 못해 소외되었다는 느낌, 집단에 소속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넘어 자신은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등 안타까운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더 나아가 패배 의식에 기초한 깊은 분노를 갖게 됩니다.

❸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

국가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교육적 지원과 돌봄 프로그램은 모두 학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은 해마다 7~10만 명씩 생겨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코로나에 얼마나 감염되었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 저출생 문제로 국가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청소년은 모두 귀한 존재입니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도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2. 해결 방안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자유와 자주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새로운 교육 체계가 필요합니다.

❶ 현행 입시제도의 완전한 해체 필요

학력 인증을 위한 국·영·수 중심의 입시제도 대신, 대학에 진학하는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는 열린 제도가 필요합니다.

- 현행 입시제도는 획일적인 관문일 뿐으로, 꿈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큰 사회적 장벽입니다.
- 청소년들을 경쟁으로 몰아넣어 우등과 열등의 양극화를 심화하는 시스템을 버리고 모든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어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❷ 청소년들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혁신적인 제도 필요

청소년의 다양한 삶을 인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려면, 학교 현장이 교육 당국의 중앙 집권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 유럽의 경우 교육 정책에 학생의 정신 건강 정책을 포함합니다. 또한 지역 현장에 맞는 교육,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교육, 학교 내에서 서로 연대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학교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보장하고 학교를 소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돌봄의 손길을 보낼 수 있다면 학생, 학교, 지역 사회가 원활하게 연결되어 청소년의 실패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 교육 과정 편성 시 개별화와 집단화 배치를 학교 사정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고, 학생회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등 학교에 최대한의 자치 권한이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실험형 공립 대안 학교 설립을 적극 확대하여 교육 현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 외국의 일부 실험형 대안 학교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담임 공약제', 교육 과정을 교육 주체의 제안에 따라 편성하는 '자유 교과제', 각 학생이 자신의 개성에 맞는 과제를 수행하는 '효율적 개별화 과제' 등이 그 예입니다.
-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고 실질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가 혁신되어야 합니다.

미래세대 및 우리와 함께 살아갈 지구 생명 공동체들을 대표하고 이익을 만들어 갈 헌정 체제(제4부 '미래심의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병진 교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1. 질문의 맥락

미래세대와 모든 지구 생명체에게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❶ 미래의 공존공영에 대한 화두를 던져야 할 시점

젊은 세대 및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지구 공동체를 지금부터 고려하지 않으면 공존공영의 공화주의, 민주 공화국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 전 세계가 본격적인 기후 위기 국면에 돌입한 현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리는 결정은 젊은 세대 및 앞으로 태어날 세대, 그리고 지구 공동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이들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사 결정 구조, 정치 질서,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정치권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❷ 생태 민주주의 부활 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주창한 '생태 민주주의'가 21세기의 화두로 부활해야 합니다.

- 김대중 대통령이 선구적으로 제기했고 민주당의 주요 가치가 되어야 할 생태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과감하게 실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 생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은 소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미래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현실에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2. 해결 방안

'미래심의부'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의사 결정을 진행하고 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구입니다. 이 기구의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❶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외의 4부로서 미래심의부 구성 필요

미래심의부는 젊은 세대 및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와 동식물을 포함한 지구 공동체가 맞이할 중장기적인 미래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내리는 결정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 미래심의부는 AI, 기후 위기 등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중장기적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 미래의 이익을 대표해 온 권위자, 생태주의자 등의 전문가와 추첨을 통해 선발된 일반 시민들로 미래심의부를 구성하고, 각 구성원은 미래 과제들을 주제로 한 다양한 워크숍 등을 통해 깊은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 미래심의부는 국회미래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의 도움을 받아 정책 내용의 검증을 거치고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역할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결정한 어젠다 중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와 지구 공동체에 치명적 피해를 끼치는 법안이 있다면, 영향 평가 등을 통해 비토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❷ 비인간 존재를 대표하는 체제

오랫동안 생태적 공동체를 지향해 온 이들은 '비인간 존재를 대표하는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화두를 품고 있었습니다.

- 뉴질랜드는 황거누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해당 강에 사단 법인과 비슷한 법적 권리를 주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급변한다면 머지않아 DMZ, 한강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아이디어가 한반도 생명·평화 체제의 일환으로 생각보다 빨리 논의될 수 있습니다.

❸ K-민주주의가 모범이 되어 전 세계를 주도

우리나라가 유럽 일각에서 실험 중인 '시민 의회' 개념을 포함하여 비인간 존재들의 의사까지 대표하는 기구에 대한 구상을 선도적으로 시도한다면 K-민주주의는 모범을 보이는 위치에서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영국 웨일즈는 결정 구속력이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미래세대 커미셔너'를 통해 미래세대의 보호자 역할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 정치권과 차기 정부는 개헌을 통해 시민들의 위대한 촛불 정신과 헌정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을 반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나라의 발전에는 국가 원로와 지혜로운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는 보수적 관점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진보적 관점이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여 공존공영의 민주 공화국을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만 수립하고 실행은 못 하는 우리나라, 더 늦기 전에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유진 소장
녹색전환연구소

1. 질문의 맥락

기후 위기는 이미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광범위한 파괴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이를 환경문제로만 보고 있는 건가요?

❶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파급 효과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재난, 경제, 통상, 산업, 금융, 농업, 주거, 교통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위기입니다.

-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추세입니다.
- 지난해 찾아온 태풍으로 인한 폭우가 우리나라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혀 시민들의 밥상 물가가 영향을 받았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 위기는 일상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 따라서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❷ 한국의 기후 위기 대응 현황

우리나라는 202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7.6%를 감축하는 데 그쳐 2030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으며,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❸ 국제사회와 주요 국가의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

이미 주요 국가들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 감축을 시작했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를 통해, 미국은 '해외 오염 관세법'을 통해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무역 장벽을 설정하는 등 기후 대응을 경제 및 통상 정책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 정부의 재등장으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할 거란 일각의 예상도 있지만, 미국은 이미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석탄·석유보다 경제성이 높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영국은 석탄발전소를 완전 폐쇄하고 해상 풍력발전소를 확대하여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였습니다.
- 독일은 태양광 발전(월 1GW 이상)의 대규모 확충을 통해 전체 전력의 63%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2% 이상 감축하였습니다.
- 중국 역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쌍탄소 정책'을 추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기후 위기 대응은 개별 부처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총력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이므로 기후경제부 신설, 에너지 정책 개혁, 탄소중립을 고려한 산업정책 수립 등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❶ 기후 위기 대응의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

정부 차원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산업정책 및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 기후 위기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산업, 금융, 농업, 주거, 교통, 먹거리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개별적인 정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❷ 산업 및 경제정책과 연계한 탄소중립 전략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목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변화의 핵심 요소로 작용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탄소중립과 연결하여 탄소 감축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요구하는 등의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개편이 필요합니다.

❸ 에너지 정책 개혁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문제를 단순히 가격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통해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동시에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시장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 아울러 에너지 빈곤층 보호를 위한 '에너지 복지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❹ 정부 조직 개편 및 정책 실행력 강화

기후 위기 대응을 환경부가 담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온실가스 배출의 93%가 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만큼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합니다.

- 기후경제부를 신설하여 산업 및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과 이에 따른 예산 및 정책 실행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아울러 대통령실에 기후경제수석을 신설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 조정 기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정책 이행 점검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독립적 권한 부여 필요)
- 또한, 기후시민의회를 광역 및 시군구 단위로 구성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❺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맞춘 정책 수립

글로벌 기후 규제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을 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기술, 수요 자원 관리, 섹터 커플링 기술 등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중국,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기후 정책 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 아울러 국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조합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간 우리나라가 일궈 왔던 한강의 기적이 화석연료 문명과 공멸하지 않으려면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동재 팀장
기후솔루션

1. 질문의 맥락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탈탄소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❶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대응 부족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작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으며, 공적 금융으로 해외 화석연료 지원을 전 세계 2위 수준으로 하고 있어 '기후 악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❷ 글로벌 산업 변화와 우리나라의 경쟁력

유럽·호주·미국 등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전환 중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친환경 정책이 확대되고 있어, 제조업 기반의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확보가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배터리, 전기차, 해상풍력 등의 시장에서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❸ 우리나라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문제

우리나라의 LNG 중심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고, 규제 문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역시 저하되고 있습니다.
- 특히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시설 설치 규제가 심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❹ 화석연료 의존과 전기요금 문제

60%에 달하는 화석연료 발전 의존율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화석연료 가격 변동성이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 따라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한데, 재생에너지는 장기적으로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설치 비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❺ 공적 금융 및 정책 지원 부족

우리나라의 공적 금융(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은 여전히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어, 산업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 반면 해외에서는 화석연료 금융 지원을 제한하고 재생에너지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구조 전환, 공적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기업의 혁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❶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책 개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 R&D 투자 강화, 공적 금융 전환이 시급합니다.

- 태양광·풍력발전소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송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국내 재생에너지 및 배터리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 개발을 중단 없이 지원하며,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❷ 산업 경쟁력 확보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 강화, 그린 수소·철강·선박 분야 기술 개발, 기업 RE100 대응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금융 지원 분야를 화석연료 사업에서 탈탄소 사업으로 전환하고, LG·SK·삼성 등 배터리 제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소 환원 제철·무탄소 선박 기술 등을 개발하여 신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❸ 전력 시장 개혁

신규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화석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전력 시장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가 계통 연계에서 우선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 석탄·LNG 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분산형 전원(태양광, 풍력 등)에 맞는 ESS 등의 유연성 자원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❹ 탈탄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정부 지원 강화

국가 간 협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일관성 유지를 통해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유럽·미국·동남아 등과 재생에너지 성장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며, 정부와 공적 금융이 지속적이고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단호한 신호를 기업에 꾸준히 보내야 합니다.

1500만 대의 가스보일러로 탄소중립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왜 히트펌프를 고민하지 않을까요?

권필석 소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1. 질문의 맥락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히트펌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탄소중립과 거리가 먼 가스보일러를 언제까지 써야 할까요?

❶ 탄소중립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화석연료 사용

우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하면서도 여전히 일상 속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솔린이나 디젤유를 연료로 삼는 자동차를 타고, 가스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합니다.
- 유럽과 미국에서는 히트펌프가 가정용 난방 기기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여전히 가스보일러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기존 가스보일러보다 효율이 약 10% 향상된 콘덴싱 가스보일러를 친환경 제품으로 포장해 화석연료 보일러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❷ 유럽, 미국 등 히트펌프 보급 보편화

히트펌프는 외부의 열을 이용하여 내부의 기온을 바꾸어 주는 난방 장치로, 냉매의 상태 변화(증발과 응축) 과정에서 일어나는 열전달을 통해 저온의 열원을 고온으로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난방을 합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스 요금이 급등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설치 보조금과 정책 지원을 통해 히트펌프를 빠르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난방 기기를 히트펌프로 전환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히트펌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설치 인력이 부족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 특히 유럽은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히트펌프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중입니다. 독일은 2024년부터 연간 50만 대의 히트펌프 설치를 목표로 세웠고, 영국은 2028년까지 연간 60만 대 보급을 목표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도 히트펌프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판매량이 430만 대에 달했고, 천연가스 보일러 판매량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IRA(Inflation Reduction Act)'를 통해 히트펌프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고, 주별로 추가적인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며 보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아이러니한 점은 LG와 삼성이 세계적인 수준의 히트펌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유럽과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에는 히트펌프를 설치해 사용하는 가구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❸ 전기화를 저해하는 누진 요금제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 증가 폭이 커지는 누진 요금제는 전기화를 고민하는 각 개인에게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도시가스 보일러는 1500만 대 수준(가스안전공사 전국 도시가스 보일러 현황 DB)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두를 교체할 수 없으므로, 가스보일러의 수명을 고려하여 약 10년에 걸쳐 전기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혹자는 전기를 사용하면 결국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비하게 되므로 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를 직접 활용하는 기술 제품(예: 전기차, 히트펌프 등)은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는 장치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의 에너지 변환 효율이 더 높듯이, 히트펌프 또한 가스보일러보다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열을 생산할 수 있어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난방 기기와 이동 수단을 포함한 각종 분야의 전반적인 전기화가 필수적입니다.

2. 해결 방안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1500만 가스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는 히트펌프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❶ 히트펌프 전용 요금제

히트펌프의 장점(고효율, 친환경성)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현재의 누진 요금제를 개선하거나 히트펌프에 맞춘 별도의 요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전기차를 가정에서 충전할 경우 이에 쓰이는 전기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 요금제와는 별개의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 히트펌프 전용 요금제를 도입한다면, 난방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❷ 히트펌프와 재생에너지 연계

히트펌프와 열 저장소를 활용하면 남는 전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될 때, 히트펌프를 이용해 미리 뜨거운 물을 데워 보온성이 뛰어난 탱크에 저장해 두면 이후 난방에 활용하거나 온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장 방식은 배터리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현재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출력 제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기나 히트펌프를 건물에 많이 설치하면, 재생에너지가 과잉 생산될 때 남는 전력을 저장해 두었더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어 전력 사용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 이러한 방식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망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돕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❸ 히트펌프와 패시브 하우스 및 도시가스 소외 지역 연계

패시브 하우스는 단열률과 기밀성이 뛰어나 마치 보온병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집으로, 난방 에너지가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히트펌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패시브 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전기 요금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히트펌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트펌프는 아직 일반적인 보일러만큼 대중적이지 않으며, LG나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서 주거용 히트펌프 제품 라인업을 충분히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 관련 개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도시가스가 닿지 않는 지방에서는 아직도 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방식은 비효율적이므로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비를 함께 설치한다면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난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❹ 아파트형 히트펌프 시범 단지

히트펌프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려면 신규 택지에 히트펌프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아파트에 적용할 히트펌프 기술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해외 사례가 적어 참고할 곳이 없으므로, 우리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시범 단지를 조성해 히트펌프 아파트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 시범 단지에서는 태양광발전시스템과 결합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히트펌프가 우리나라의 주요 난방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OPQR*

*오늘 필요한 질문을 큐레이션해서 알려드림

‘OPQR’은 〈모두의 질문Q〉 웹사이트에 올라온 시민 인터뷰 영상 38편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사람들은 특별한 이들이 아닙니다. 매일 마주치는 택배 기사, 카페 사장님, 초등학교 교사, 걸그룹 팬처럼 우리 곁의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또한 쉽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장애인, 의료 운동가, 귀촌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공동체 생활을 실험 중인 청년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삶에서 마주한 질문을 꺼내 놓았습니다.

한국 사회를 가르는 정치의 양극화, 청년의 미래를 위협하는 교육과 주거 문제, 신뢰를 잃은 언론과 연금에 대한 불안까지, 질문들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박태웅 〈모두의 질문Q〉 대표는 지식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행복, 노동과 부동산, 제조업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법과 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 갈 수 있을지 함께 논의했습니다.

‘OPQR’은 ‘우리가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를 묻는 동시에, 이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시민의 얼굴과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르지만,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싶은 바람만큼은 모두 같았습니다.

OPQR 인터뷰 목차

1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 조장한 혐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우 맘 권순영
2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의료 후진국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의사 전진한
3 배달 라이더들, 왜 이렇게 빨리 달리는지 궁금하셨죠?	플랫폼배달노동자 구교현
4 '뉴진스' 하니는 왜 국감장에 나가야 했을까?	버니즈 이교현
5 2027년까지 목돈 6000만 원 모으기가 꿈이었던 청년 노동자의 죽음 19살 정현이는 왜 죽었나?	정현이 이모 김현주
6 중국은 딥시크를 만들었다는데, 우리나라 AI의 미래는?	인공지능 전문가 하정우
7 아직도〈리틀 포레스트〉꿈꾸며 시골에 오신다고요? 청년 농부가 말하는 농촌 현실	긍정 농부 차정환
8 신생아 필수품, 아기 전용 제품들, 정말 다 필요한 것 맞나요?	영국 아빠 다니엘
9 전국에 맛집과 가보고 싶은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최소한 1층이라도 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장애 인권 운동가 박김영희
10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경제 전문기자 김원장
11 전라도나 경상도나,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지방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다 똑같지 않나요?	귀촌 청년 김형수
12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청년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나요? 먹고사니즘은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닌가요?	사회정책 연구자 이승윤
13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발달장애인인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술가 정은혜
14 26살에 발달장애인 아이를 낳았습니다. 엄마인 제가 죽으면 은혜는 어떡해야 하나요?	은혜 씨 엄마 장차현실
15 한국 교육이 윤석열을 키워 냈을지도 모른다?! 파시스트를 키워 내는 교육,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독문학자 김누리
16 자취방에 살다 전세 사기 당하고, 청년 임대주택은 보증금이 비싸 못 들어가는 제가 대한민국 평균 30대 맞나요?	청년 전성훈
17 불법체류자의 자식으로 숨어 산 지 20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꼭 쫓겨나야 할까요?	미등록 이주 아동 마리나
18 건국절에 김구 선생 국적 논란까지. 뉴라이트, 역사를 왜 정치에 이용합니까?	역사학자 박태균
19 우리는 반려동물과 함께 나이 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수의사 박정윤
20 국민들이 왜 헌법을 공부해야 합니까? 개헌, 진짜 필요합니까?	법률가 차병직
21 에너지에 좌파, 우파가 왜 필요합니까? 재생에너지, 환경문제를 넘어선 글로벌 제조업 패권전쟁입니다.	애널리스트 한병화
22 일회용품을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오락가락,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어쩌라고요?	을지로 카페 사장 주철홍
23 부동산 투기가 언제부터 필수 재테크가 되었나요? '오징어게임'에 빠져 버린 한국 부동산, 이 게임을 끝낼 수는 없나요?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남기업
24 언제까지 정상가족 타령만 할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위안이 되어 주는 관계, 이게 가족이 아니면 뭔가요?	10년째 친구들과 동거 중인 김주온
25 되고싶은 직업 1위가 선생님이라는건 예전 이야기, 지금 직업만족도 어떻냐고요?	초등학교 교사 현운석
26 한국 제조업 위기인가 vs 기회인가?	경남연구원 남종석
27 비상식이 일상이 된 요즘, 헌재의 현재 상황에 언론은 책임이 없을까요?	언론학자 정준희
28 상위 5%를 꿈꾸며 루저를 양산하는 한국사회, 이젠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요?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유승규
29 국민연금 개혁 이제 시작이죠, 미래세대를 위해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금융공학자 김우창
30 못 배웠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조업과 지역을 살리자고요? 암담한 지역 청년들의 현실을 아십니까?	「쇳밥일지」 저자 천현우
31 부산·울산·경남 청년들은 왜 고향을 떠나게 될까요? 부울경 산업도시, 더 늦기 전에 바뀌어야 합니다	중공업 도시 연구자 양승훈
32 제2의 BTS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속가능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중문화 평론가 차우진
33 저출생 시대, 여자도 군대 가라! 근데 한국 군대, 진짜 성평등한 거 맞나요?	전직 군사경찰 전미선
34 탄핵 이후, 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민주주의의 안정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입니다	경제학자 이상민
35 학교 청소부들을 고소한 명문대생들,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직업의 귀천이 없는 세상 가능할까요?	청소 노동자 문유례
36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어디에 있나요?	사회복지사 최지원
37 운동선수는 금메달만 따면 되나요?	전직 하키 선수 함은주
38 행복한 한국 사회가 되려면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모두 함께 시작입니다.	행정학자 최영준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 조장한 혐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OPQR_지우 맘 권순영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 중인, 17개월 아이 지우의 엄마

질문자 ▪ 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 뭐 하고 계셨어요?

권순영 ▪ 그때 저희 아이가 16개월이었는데, 그 시간은 육퇴 시간이었어요.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집안일 다 끝내 놓고서 맥주 한 캔 까고 있었어요. 아는 분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있어?" "아니, 안 보고 있는데요." 그분이 보내 주신 동영상을 봤더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아, 나라가 망했구나' 싶었죠. 계엄,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사회 시스템이 마비되고 많은 것들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걱정했죠.

계엄이 터졌다. 광장에 나가야겠다. 아기와 함께.

권순영 ▪ 겨울이 온 뒤로 아이랑 단둘이 외출한 적이 없었어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유모차도 잘 안 타서 웬만하면 데리고 나가지 않는데, 광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는 거예요. '저기로 가야 한다, 머릿수 하나를 꼭 보태야 한다.'

전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일단 나가 보자 마음을 먹고 아이한테 옷을 입히기 시작했어요. 추우면 안 되니까 여러 겹 입혀 놓고 저도 잠바를 두 개 입었어요. 여차하면 아이한테 덮어 주려고요. 아기 띠를 매고, 혹시 몰라서 양말하고 바지를 더 넣고, 아이 보온 장비랑 간식을 챙겼어요. 삶은 고구마하고 따뜻한 물을. 그리고 기저귀, 물티슈에 천까지 챙겼어요. 배낭을 짊어지고 나가려니 그야말로 한 짐이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싶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에 내린 다음 당산으로 갔어요. 사람들 따라서 가다 보니까 여의도 국회 인근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질문자 ▪ 다리를 건너서요?

권순영 ▪ 네. 그게 다리였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갔어요. 일단 당산역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줄줄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지도 앱을 끄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걸었어요.

질문자 ▪ 거의 피난 가는 수준이었죠.(웃음)

권순영 ▪ 맞아요. 피난민 같았어요.(웃음)

16개월 아기와 함께한 광장은?

권순영 ▪ 집회 현장에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긴 했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빼곡했어요. 아이는 키가 작잖아요. 어른들이 다 서 있으니까 좀 무서워하는 거예요. 원래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간식 먹일 곳도 마땅치 않고, 여러모로 힘들더라고요.

질문자 ▪ 밤이라 어둡고, 사람들은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권순영 ▪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빨리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나가는 데 또 한 세월이 걸렸죠.

질문자 ▪ 혹시 그날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을 또 보셨나요?

권순영 ▪ 거의 못 봤어요. 더 계시긴 했다고 들었어요. 다들 저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나와 있었고, 카페를 찾아서 헤맸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빨리 귀가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질문자 ▪ 그날 몇 시에 귀가하셨어요?

권순영 ▪ 집에 도착했을 때가 밤 10시 좀 넘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다시는 못 나가겠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질문자 ▪ 아이랑 집회에 참석하기가 힘들다는 걸 직접 경험하셨는데, 어쩌다 그다음 집회 때 키즈 버스를 마련하게 되신 거예요?

권순영 ▪ 토요일 밤에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잠들었죠. 다음 날이 됐어요. 올라오는 소식들을 보고 있으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탄핵 소추안 투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불성립이 되니까.

"명패함 확인 결과 총 195매로써,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영 ▪ 제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키즈 버스나 키즈 천막을 누가 마련해 주면, 나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인들이 댓글로 '주최 측에 문의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 봤는데, 광장에는 장애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고령의 어르신들도 계실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고 "영유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라고 요구하기가 좀 뭣하더라고요. 나만 편하자고 그런 부탁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를 빌려서 세워 놓자. 거기서 우리 지우를 케어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쓰시도록 하면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죠.

버스 가격부터 알아봤어요. '할 만한데?' 싶더라고요. 대절 비용이 66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100만 원도 안 드는데, 한번 큰마음 먹고 해 볼 만하겠다 생각했죠. 버스 하나를 저 혼자 쓰면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더라고요.

"우리 아이 500일 기념 여행비를 털어 버스를 빌렸습니다. 같은 처지인 분들(그리고 우리 아이들) 바람이라도 피하고, 기저귀라도 편히 갈아 봐요!"

권순영 ▪ 버스를 세우는 위치는 당일에 결정될 테니까, 그 위치를 공유하기 위한 카톡 방을 열었어요. 모든 일은 그 방에

들어오신 부모님들이 진행시켜 주셨어요. 누군가 현수막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면 현수막을 만들어 오겠다는 분이 나오고, 깃발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깃발을 만들겠다는 분이 나오고, 누군가 아이들 간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후원하겠다는 분이 나왔어요. 기저귀, 물, 미아 방지 팔찌가 그런 식으로 준비됐어요.

진짜 뭉클했어요. 그 방에 계시던 한 엄마의 표현이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대한민국 진짜 살 만한데, 우리 아직 진짜 너무 괜찮은데."

키즈 버스 지우 맘의 질문은?

질문자 ▪ 광장에서 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질문을 던져 주실 수 있을까요?

권순영 ▪ 엄마들은 이런 걱정을 늘 하고 있잖아요. '혹시 내가 맘충이면 어떡하지?',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이기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면 어쩌지?', '아이 키운다고 유난스럽게 군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엄마로서는 아이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아이를 사회의 일원으로 키우는 과정 중 하나죠. 아이는 아무래도 어른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니까 제가 잘 살피고 케어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온 신경이 바깥으로 쏠려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와 나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싶어서요.

질문자 ▪ 왜 아이를 낳으면 갑자기 남의 눈치를 보게 될까요?

권순영 ▪ '맘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단어로 표현되는 수많은 혐오의 영역이 생겼잖아요. 아이 엄마에 대한 혐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에 대한 혐오라고 봐요.

질문자 ▪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을 혐오하는 거죠.

권순영 ▪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요. 아이가 지하철에서 한 번씩 소리를 지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아이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공공 공간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16개월 된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공적인 공간에서 울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하죠.

광장과 키즈 버스, 이곳에서 만난 '우리나라의 오늘'은?

권순영 ▪ 키즈 버스가 있는 광장에서는 아이랑 같이 있어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춥고 사람이 많은데 왜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예스 키즈 존'이었던 거죠. 처음 보는 아이들끼리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가 제대로 복원된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런 곳에서는 진짜 아이를 키울 만하겠다' 생각했어요.

광장은 특별한 공간이에요. 우리는 때로 줄을 제대로 서지 않고 사람들을 밀치면서 다니기도 하지만, 광장에서는 질서를 지키죠. 광장에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커피값 500만 원을 선결제한 분이 계시잖아요. 돈을 그렇게 써도 별로 아깝지 않으셨던 거예요. 누군가가 잘 이용해 주기만 한다면 감사하다고 생각하셨겠죠. 집회 후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다 치우고 갔다는 사실이 화제가 됐는데, 그게 광장의 힘인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제가 만난 광장은 따뜻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엿보이고, 희망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정서가 훨씬 더 많이 깔려 있었어요.

1월 25일, 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지우 맘과 키즈 버스 참여자들. 넘치는 후원금을 1000개의 호빵으로 바꾸어 시민들 손에 전하다.

권순영 ▪ 그날 이후로 40일이 지났네요. 40일 전과 지금의 제 생각 사이에는 괴리가 굉장히 커요. 우리 아이가 여자아이라, 예전에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약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아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키울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광장에서 희망을 본 이후로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회의 혐오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 낸 걸까요?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 조장한 혐오 속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의료 후진국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OPQR_의사 전진한
10년 차 가정의학과 의사, 인도주의실천의료협의회 정책국장

질문자 ▪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밤에 국회로 가셨다고요.

전진한 ▪ 나가면 총 맞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국회로 갔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먼저 와 있던 분들이 군인들이 탄 차를 막고 계셨고, 머리 위에서는 헬기가 떠다니고 있었어요. 아예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군인들이랑 몸싸움을 하는 분들도 계셨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3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안이 가결되고 상황이 끝나서 집에 가려고 하니까, 교통 통제 때문에 택시를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택시 한 대가 보이는 거예요. 탈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타라면서 말씀하시기를, 근처에서 영업하다가 뉴스를 보고 국회로 오셨대요. 군인들이랑 싸웠다면서 영상을 보여 주시더라고요. 저더러 고생했다고, 택시비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10년 차 가정의학과 의사, 인도주의실천의료협의회 정책국장이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

질문자 ▪ 광장에는 몇 번 나가셨나요?

전진한 ▪ 12.3 이후로는 토요일 집회에 매번 나갔고, 평일에도 때때로 나갔어요. 한두 번 빼고 계속 나갔죠. 남태령, 한남동에도 갔어요.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는 아픈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찰과상을 입었거나 경증 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약을 드리면 되는 정도였는데, 남태령하고 한남동에는 정말 아픈 사람이 많았어요. 체력의 한계를 넘기면서까지 길에서 밤을 새우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드셨던 거죠.

한남동에서는 3박 4일 동안 시위가 이어졌잖아요. 저체온증 환자가 많았습니다. 너무 추워하시는 분이 계셔서 귀에 체온계를 가져다 댔더니 에러가 나는 거예요. 고장이 났나 싶어서 제 귀에 대 보니까 잘 작동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추위에 시달리셨어요. 심장 수술을 받으셨다는 분도 있었고, 기저질환 있는 분들도 수두룩했어요. 고혈압이 있다는 분의 혈압을 재 보니까 너무 높게 나오더라고요. 댁으로 가시거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려도 가질 않으세요. 약 먹으면 된다, 끝까지 여기에 있겠다면서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의료 부스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간절해져서 눈물이 계속 났었죠.

돌아보면 한 순간 한 순간이 결정적이었어요. 12.3 때 국회로 갔던 사람들, 여의도에 모였던 사람들,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밤을 새웠던 사람들, 그 추운 겨울에 토요일마다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계엄과 관련한 계획이 성공했을 수도 있고, 대통령 직무 정지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한테 모두가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의료 선진국이 맞을까?

질문자 ▪ 광장의 의사, 전진한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세요?

전진한 ▪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 맞는지 질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질문자 ▪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료보험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 잘되어 있다고요. 아닌가요?

전진한 ▪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에 그나마 잘 운영되는 제도여서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지키려 하는 건데, 실제 수치를 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최하위예요.

질문자 ▪ 외국 분들이 우리 의료 서비스를 언급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의외네요.

전진한 ▪ OECD에서 매년 건강 관련 데이터를 발표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공공 의료 시스템이 가장 덜 갖춰져 있고, CT나 MRI 같은 기계의 수와 과잉 진료 건수는 제일 많고, 병상은 많은데 의료 인력은 가장 적은 나라예요. 인구당 간호 인력이 OECD 평균의 절반이고 병상 대비 1/5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식사도 못 하고 화장실도 못 가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물을 잘 안 드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OECD 국가 중 민간형 의료 체계에 속해 있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뿐

전진한 ▪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들 의료비가 수천만 원씩 나왔어요. 억대로 나온 경우도 있었죠. 우리나라는 중병에 걸리면 치료비를 아주 많이 내야 하는 나라예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써야 하는 가구의 비율을 보면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수치가 높아요.

미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없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의료 여건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 좋아요.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는 아플 때 돈 걱정을 제일 많이 해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수의 OECD 국가들은 공공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만 시장형 의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의 약 10% 수준에 머무는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 비율

전진한 ▪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지방 의료원이 전국에 40개 정도 있고, 각 지역에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있고, 국립대 병원이 있죠. 그 외에는 대부분

민간 병원이에요. 우리나라 병원의 95%가 민간 병원이고, 공공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 5%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팬데믹 때 70%의 환자를 치료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적게 발생했죠. 환자 수가 적은데도 병상이 포화된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잖아요. 민간 병원들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코로나 환자를 잘 받지 않았고,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공공병원만 코로나 환자를 치료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기존에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들, 가난한 환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소개됐어요. 달리 표현하자면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예요. 그분들이 나간 자리에 코로나 환자가 들어왔던 거죠. 당시에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졌고, 언론에도 보도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잊어버렸을 겁니다.

보수 언론들은 '영국을 봐라. 무상의료, 공공 의료를 도입했더니 병원 대기 시간이 길고 난리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건 공공 의료가 긴축정책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을 공공 의료 자체의 문제로 치환시킨 주장이에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잘되어 있고 오히려 유럽이 문제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가짜 뉴스예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논란, 의대 증원에 의정 갈등 폭발… 학교 떠난 의대생들

전진한 ▪ 우리나라의 환자들은 중병에 걸리면 서울로 가야 합니다. 지방에는 갈 만한 병원이 없죠.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근처에는 고시원, 고시텔이 있어요. 환자들이 그곳에서 지내면서 병원에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이 많은 서울에서도 응급환자가 생기면 구급차가 뺑뺑이를 돕니다. 환자가 갈 곳이 없어서요.

많은 의사들은 의사 수를 절대 늘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적고, 의사가 배출되는 속도도 느립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해요.

하지만 의사 수 자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지금 배출되는 의사의 상당수가 피부 미용·성형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동네에 의원을 차려서 온갖 비급여 진료로 돈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분야로 가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손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의대생을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늘어난 수의 의대생들을 지역 의대에 배치한다고 하지만, 무늬만 지역 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울산대 의대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것처럼요.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지역을 살리겠다면서 정작 지역의 공공병원 예산은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환자들을 돌볼 병원이 없는데도요.

의료 선진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자 ▪ 의료 면에서 좋은 나라란 어떤 나라일까요?

전진한 ▪ 공공 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의료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는 사회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면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질문자 ▪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전진한 ▪ 쉽지는 않을 거예요.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상태에서 사회를 다시 복원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는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니까 공공적으로 만들자'라는 압력이 커졌고 제로 베이스에서 공공 의료가 구축됐어요.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는 전체 병원의 95%가 민간 병원인 상황이고,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넓고, 재벌들이 보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죠. 관련된 이해당사자도 많고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스템을 바꾸려면 정말 큰 운동을 해야 할 거예요.

질문자 ▪ 어떻게 해야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전진한 ▪ 그 '큰 운동'을 해야죠.

질문자 ▪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웃음)

전진한 ▪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희망을 보긴 했어요. 이렇게 추운데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까 싶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직접 오지 못하는 분들은 음식을 갖다 주고, 온갖 물품들을 보내 주세요. 방한용품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리고 의료 부스를 마련해 놓으면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한남동에서 그랬던 것처럼 3박 4일씩 집회를 하다 보면 의료진이 부족해지거든요. SNS에 SOS를 쳤더니 간호사분들이 너도나도 밤을 새우겠다고 자원하시더라고요. 이런 집회가 사람들의 연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게 증명됐죠. 그 안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낱낱의 개인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연대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의료 부스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바람직한 사회의 축소판을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파 집회 참여자들이 저희 쪽 의료 부스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쪽에는 의료 부스가 없어서 용기 내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치료해 드렸죠. 그런 순간에도 앞으로 이 사회가 바뀔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봤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운동을 해 나간다면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시간들이었어요.

배달 라이더들, 왜 이렇게 빨리 달리는지 궁금하셨죠?

OPQR_플랫폼 배달 노동자 구교현,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질문자 ▪ 비상계엄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구교현 ▪ 조합원들이 텔레그램 방에서 비상계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술 한잔했나' 생각했어요. 찾아보니까 정말 비상계엄령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때부터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봤죠.

대통령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난데없이 저질렀으니 책임을 묻기도 해야겠고, 저희 목소리도 좀 내고 싶었어요. 토요일에 집회가 열린다고 하니 가급적 가 보자고 얘기를 나눴죠. 수원에서도 오고, 청주에서도 왔어요.

사실 저희는 집회에 한 번 오려면 다 파업을 해야 하거든요. 일을 쉬어야 하는 거니까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런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더 강했던 거예요.

'배달 라이더의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탄핵 집회 이송과 물품 운송을 지원합니다!'

구교현 ▪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문의를 받았어요. 핫팩이나 응원봉을 제작해서 들고 오시는 분들이 차량을 집회 대오 안까지 끌고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 물품들을 날라 줄 수 있는지 묻는 분도 계셨고요. 집회 장소 근처의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를 하니까 여의도 근처의 당산역, 마포역, 신길역에서 집회 현장까지 데려다줄 수 있는지 묻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서로를 도왔죠.

배달 라이더 구교현의 질문은?

구교현 ▪ '이 콜은 왜 나한테 왔을까?', '내가 원하는 콜은 왜 나한테 안 올까?' 플랫폼에 아무리 물어봐도 답을 들을 수 없고, 콜이 오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죠.

소비자분들이 가게에 주문을 하시면 '배달의민족', '쿠팡' 같은 플랫폼이 라이더와 가게 사이에서 중개를 하거든요. 들어온 주문을 라이더에게 배차할 때 소위 알고리즘이 작동하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라이더에게 배정되는지, 근속연수가 더 긴 라이더에게 배정되는지, 배달 속도가 더 빠르다고 평가된 라이더에게 배정되는지 저희는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라이더보다 콜을 더 받거나 덜 받는 이유도 알지 못하죠. 그 점이 문제예요.

배달의 값

구교현 ▪ 인터넷에는 배달 라이더를 구하는 광고가 되게 많아요. 1시간에 얼마를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해요. 부업으로 해 보라는 거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직장인분들이든 부수입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수입이 있어야만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면 배달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죠.

일을 해 보면 시간대별로 배달료가 다르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주문량이 몰리니까 일시적으로 운임을 높여요. 라이더 입장에서는 그 시간만큼은 눈에 불을 켜고 경쟁적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달료가 올라가 있을 때 콜 하나라도 더 받아야 수입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마음 편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안전하게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당연한 걸 당연하게 누리는 사회

구교현 ▪ 그런 생각으로 달리다 보면 상당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져요. 앞쪽 신호가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에 빠질수록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의심하게 돼요. 플랫폼 측에서 속도가 더 빠른 라이더에게 우선 배정을 하고 있다고 느끼면, 라이더들은 경쟁적으로 속도를 더 낼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 회사들은 배차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영업비밀이라면서 다 가려 놨죠. 공식적인 답변은 '랜덤 배차'예요. 무작위로 배차하고 있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모든 라이더들이 알고 있어요.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라이더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2주에 한 명꼴로 사망사고가 일어나요. 그런 상황을 원하는 고객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저 음식이 잘 오기를 바랄 뿐이죠. 이 모든 상황의 바탕에는 플랫폼 회사의 결정이 있는데, 플랫폼 회사는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아요.

라이더유니온은 배달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2025년 1월 전국 대행진을 진행했다. 플랫폼 알고리즘,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뉴진스’ 하니는 왜 국감장에 나가야 했을까?

OPQR_버니즈 이교현
광장에 나온 ‘뉴진스’의 팬 버니즈

질문자 ▪ 요즘의 최대 관심사는 뭔가요?

이교현 ▪ 뉴진스, 그림, 기타? 공부는 별로 안 했고요.(웃음) 학교 갔다 오면 기타 치고, 레슨 받고, 뉴진스 영상이 뜨면 찾아보고, SNS에 공유하고, 또 팬아트도 그리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질문자 ▪ 잘 지내시던 중에 계엄령 소식을 들으신 거군요.

이교현 ▪ 그때 마침 SNS를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헛소문인 줄 알았어요. ‘이게 말이 돼?’ 하고 뉴스를 찾아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계엄법 제14조 별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교현 ▪ 무서웠죠. 사람들을 상대로 총을 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텍스트로만 접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일단 너무 무서웠어요. 그 뒤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 시민들이 군인들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저도 용기 있게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질문자 ▪ 집회 현장에 여러 번 다녀오셨죠. 어쩌다 응원봉을 들고 국회까지 가시게 되셨어요?

이교현 ▪ 아이돌 팬들이 응원봉을 들고 탄핵 집회에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응원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 ‘너를 위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게.’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취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또, 응원봉 불빛은 꺼지지 않잖아요. 꺼지지 않는 국민의 힘을 보여 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응원봉을 들고 나가게 됐어요.

질문자 ▪ 응원봉 외에 또 가지고 나가셨던 물건이 있나요?

이교현 ▪ 항상 가지고 다니는 뉴진스 가방이 있는데 그 안에 응원봉용 배터리, 핫 팩, 제가 만든 뉴진스 굿즈를 넣었어요. 뉴진스를 응원하는 분들, 뉴진스 팬들인 ‘버니즈’분들이 집회에 많이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뭔가를 좀 나눠 드리고 싶어서 왕창 챙겨 갔어요.

질문자 ▪ 실제로 버니즈분들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교현 ▪ 아, 너무 좋죠. 저희 응원봉이 토끼 모양이잖아요. 응원봉으로 악수하듯 인사해요. 서로 먹을 것들 챙겨 주고요.

질문자 ▪ 집회 현장에 20대 여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교현 ▪ 눈에 띄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나라가 어두울 때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 사람들. 그중 한 사람, 이교현.

질문자 ▪ 그날 저녁에 나가셨던 거죠?

이교현 ▪ 네. 학교 수업 마치고 바로 갔어요. 기말고사 시즌이었는데 책이 손에 잡히질 않아서 뛰쳐나갔어요.

질문자 ▪ 시험을 안 보신 건 아니죠?

이교현 ▪ 보긴 봤는데, 안 본 거나 마찬가지인 점수가 나왔어요.(웃음)

질문자 ▪ 요즘의 인생 질문을 꼽는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이교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왜 이렇게 품이 많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감장에 가서 노동법 바깥에 있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 대단한 요구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싸워 나가야 하더라고요. 당연한 걸 요구하기 위해서 큰 에너지를 들여야 한다는 게 불합리하게 느껴졌어요.

질문자 ▪ 여의도 집회에 나갔던 날에 교현 씨는 어디에 계셨어요?

이교현 ▪ 국회의사당역에서 내리면 의사당대로 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모인 사람들이 다 그 길에 앉아 있었거든요. 거기에 끼어서 앉거나, 깃발 들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구역에서 같이 깃발 흔들고 있었어요.

질문자 ▪ 깃발 존은 어디였어요?

이교현 ▪ 의사당대로 옆 인도요. 깃발을 든 사람 외에는 다 앉아 있었어요. 집회가 있을 때만 여기에 와서, 차가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생경하네요.

질문자 ▪ 광장에서 본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이교현 ▪ 다 같이 응원봉 들고 〈다시 만난 세계〉를 불렀을 때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두운 밤에 각자 다른 응원봉을 든 사람들이 노래에 맞춰서 응원봉을 흔들어 주는데, 마음이 든든했어요. 이 싸움은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로 세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외롭게 혼자서 싸우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희망이 생겼어요.

당신도, 광장에서 희망을 만났는가?

2027년까지 목돈 6000만 원 모으기가 꿈이었던 청년 노동자의 죽음, 19살 정현이는 왜 죽었나

OPQR_정현이 이모 김현주
인권 활동가, 전주페이퍼 사망 노동자 유가족 공동대표

김현주 ▪ 정현이 엄마 말로는, 정현이가 본인 일을 너무 알아서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대요. 엄마한테 좋은 모습, 예쁜 모습만 보여 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빨리 갔나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제 엄마, 그러니까 제 동생이 일하는 사무실 소파에서 학습지를 풀거나 하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좀 큰 뒤에는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작년 상반기에 제가 순천공고로 노동 인권 교육을 하러 갔다가 복도에서 정현이를 만났어요. 많이 컸구나 싶었죠. 살이 통통하게 쪘더라고요. 밝은 모습으로 친구들이랑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입사 6개월 만에 제지 공장에서 숨진 19살 정현이

김현주 ▪ 2024년 6월 16일 일요일이었어요. 12시 58분에 정현이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순천에 있는 장례식장을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너 미쳤냐? 순천 내려오면 끝장이야.”라고 했어요. 정현이가 지금까지 아픈 적 있었냐고 물어봤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아픈 적도 없었대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순천에 내려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전주로 올라가겠다고 했죠.

정현이는 작년 11월 전주페이퍼에 들어가서 12월 15일쯤에 정직원이 됐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죽은 거예요. 그날 정현이는 아침 8시에 출근했고, 8시 28분에는 업무 관련 통화를 했어요. 8시 48분에 연락 두절이 됐고요.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점검을 하라고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서 찾아가 봤더니 쓰러져 있었다고 해요. 9시 15분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어요.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전북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0시 30분에 사망 판정을 받았죠.

유품을 챙기러 회사 기숙사에 갔다가 이 공책을 봤어요. 정현이가 여기에 인생 계획을 적어 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다른 언어 공부하기, 두 번째는 살 빼기,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그리고 통장 분리하기. 월급 통장, 적금 통장, 교통비 통장을 따로 마련하려고 했어요. 정현이는 살아 있었으면 공군에 갈 참이었나 봐요. 1년 9개월 복무하는 동안 64만 원~80만 원씩 모아서 2027년 2월에 제대할 때까지 6000만 원을 만든다는 계획까지 세워 놨어요.

그날 저녁에 정현이 엄마랑 이 공책을 같이 봤죠. 평소에 엄마랑 같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둡고 습하고 더운 곳에서 신입 사원 혼자 점검하게 했을까?”

김현주 ▪ 정현이가 죽은 지 3일 뒤에 전주페이퍼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현장 노동자분이 제보를 해 주셨어요. ‘원래 공장의 하수구 같은 곳에서는 황화수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도 황화수소가 발생하는 곳을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풀썩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부축해 주는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평소에 일어났는데도 왜 신입 사원을 혼자 보냈냐는 거죠. 정현이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 모르니까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2024년 7월 7일, 저희 가족이 회사 측에 항의하는 뜻에서 단식 농성을 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회사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노총과 이 가족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 안전사고가 아닌데, 억울하다.’ 사고 당시와 똑같이 조건을 맞춘 다음 대한산업보건협회를 불러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하겠다면서 기자들을 불렀어요.

오전에 들어간 기자들이 몇 시간 후에 나왔어요. 그런데 회사가 3시간 동안 기사를 못 내게 엠바고를 걸었대요. 「프레시안」 기자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기사를 냈어요. 황화수소가 누출됐다는 거예요. CBS의 「노컷뉴스」 영상을 보니까 측정기를 대는 순간부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해요. 측정기로 확인할 수 있는 최대치의 황화수소가 검출됐어요. 정현이가 사망했을 때도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오후에 회사 대표이사가 사죄를 하러 나왔어요. 그때까지 정현이는 22일 동안 전북대 병원 안치실에 있었어요. 사죄를 받고 나서야 순천으로 옮겨서 장례식을 치렀죠.

2025년 1월 7일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을 발표했고,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별개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현주 ▪ 정현이는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고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바뀔 수 있을까요?

정현이처럼 죽는 사람이 다시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은 딥시크를 만들었다는데, 우리나라 AI의 미래는?

OPQR_국가대표 인공지능 전문가 하정우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

질문자 ▪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AI라는 단어를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이 접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정우 ▪ ‘챗GPT’로 많이 접하시지 않을까요?

질문자 ▪ 주식 때문에 쓰세요.(웃음)

하정우 ▪ 아, 주식.(웃음)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군요.

단순한 신기술 이상의 존재

질문자 ▪ 처음에는 AI가 그저 새로운 신기술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정우 ▪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인공지능은 정말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가? 현재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영향을 줄 것인가?’

저는 요즘의 국가 간 AI 경쟁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벌어진 핵무기 경쟁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봐요. 현시점에서 보면 핵보유국과 미보유국의 세계적 영향력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그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작년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인공지능의 파괴력이 굉장히 커졌죠. 사실 미국은 예전부터 이런 상황을 준비해 왔습니다. 2020년 말에 NSC AI라는 조직을 연방정부 내에 구축했어요.. NSC는 안전보장이사회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안전보장이사회를 만든 거예요.

2021년 3월에 관련 보고서가 나왔는데, 정말 잘 썼고 분량이 많아요.. 요약하자면 미국이 계속 세계 1등 국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본래의 역할에 머무르는 수준을 넘어서 모든 핵심 산업 분야의 도약을 이끌어야만 경쟁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미국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AI가 국가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가?

하정우 ▪ 작년 10월에 미국에서 ‘국가 안보 각서’가 나왔어요.. 이제 인공지능은 공식적으로 안보 어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미국은 예전부터 백악관 산하의 OMB(예산관리국)라는 조직에서 인공지능을 다뤘어요. 여기에서 인공지능을 다룬다는 건 미국이 인공지능 경쟁을 준전시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예요. 국가 안보 각서의 핵심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즉 GPU나 데이터 센터에서부터 여기에 필요한 전력까지 모두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수출 가능, 적성국에는 절대 수출 불가. 그리고 애매한 나라들에는 쿼터제를 적용하겠다고 해요. 이런 결정이 나올 때마다 GPU를 만드는 회사인 엔비디아라든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는 떨어져요. 중국은 굉장히 큰 시장인데, 대중국 수출이 통제되면 매출이 많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재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보다 인공지능 기술을 더 빨리 발전시켜서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안보라는 명분 아래 기업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한 거죠.

최근의 이런 경쟁 흐름을 ‘인공지능 패권주의’, ‘신제국주의’라고 불러요. 19세기~20세기 초의 제국주의 시대에는 강대국들이 대포로 무장한 함선을 이용해서 식민지를 물리적으로 개척하고, 식민지에서 노동력과 자원을 확보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죠. 이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를 무기로 삼은 나라들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Made in Korea AI가 꼭 필요한 이유는?

하정우 ▪ ‘굳이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필요가 있나?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외국산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국 내부에서는 100점짜리 인공지능을 써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산업에 적용하지만, 바깥에 있는 나라들에는 80점짜리 인공지능을 제공해요.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듯이 사용 가능한 인공지능의 수준을 제한하는 거죠. 왜냐, 인공지능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니까요. 미국의 최첨단 우주 항공 기술을 우리나라에 주지는 않잖아요. 동맹국인데도요.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80점짜리 인공지능의 한계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만든 인공지능인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령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의 이름은 동해야, 일본해야?”라는 질문에 어떤 AI는 “동해가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다른 AI는 “일본해가 맞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겠죠. “분쟁 지역입니다.”라고 얘기하는 AI도 있을 거예요. “고구려의 역사는 어느 나라 역사에 속해?”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의 AI는 “당연히 한국사죠.”라고 답하겠지만 중국 AI는 “한국과 중국의 공통 역사예요.”라고 합니다. 동북공정이 반영되어 있죠. AI가 가치관을 가진 지식체라면,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각 나라의 문화 종속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가격 문제도 있죠. 우리가 이미 모바일을 통해서 겪어 본 문제예요. 현재 모바일 생태계는 애플과 구글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앱 서비스 수수료를 같이 30%씩 올려 버렸어요.

질문자 ▪ 담합해 버렸네요.

하정우 ▪ 우리나라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국감에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대표를 소환해서 “왜 그랬어요?”라고 물어 봐야 “그러게 말입니다.”라는 대답밖에 듣지 못해요.

질문자 ▪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는 지사일 뿐이니까요.

하정우 ▪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 AI 금수저?

하정우 ▪ 생성형 AI 시대의 포문을 연 것은 오픈AI가 2020년 6월에 출시한 GPT-3라고 봅니다. 그 뒤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라는 초거대 생성형 AI를 발표하는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발표된 대규모 언어 모델이에요.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어요. 유럽에 비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구글에 점령당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그 안에서 콘텐츠를 생성한 덕분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미국의 인공지능 역량이 100점이라면, 중국의 역량은 60점 정도 돼요. 기술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요. 이 두 국가가 1등, 2등이고요. 그 아래에는 3등 그룹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3등은 싱가포르예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밀도가 있어요. 투자, 규제, 스타트업 생태계를 비롯한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이 아주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 캐나다, 독일 등이 뒤를 잇고 있죠. 우리나라는 6위 정도인데 3위부터 10위까지는 고만고만해요. 미국의 AI 수준을 건물에 비유하자면 UAE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쯤 되는 거고요, 중국의 수준은 미국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쯤인 셈이죠. 3등 그룹은 63빌딩보다 좀 높은 건물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질문자 ▪ 얼마나 유리한 환경을 갖췄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을 쓰는데, AI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수저에 속할까요?

하정우 ▪ 은수저 정도는 되죠. 광대역 인터넷이 깔려 있었던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생성형 AI를 기준으로 보면 3등 그룹 가운데 가장 앞서 있거든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중견국가들은 AI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일본은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서 자국의 IT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5000억 달러를 꽂아 줬어요. 슈퍼컴퓨터를 사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

하정우 ▪ 인공지능의 학습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들어갈 거예요.. 그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 내는 양으로 부족하다면,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들과의 동맹이나 연합을 지금부터 고려해야겠죠.

AI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데 쓰이는 클라우드도 중요합니다. 클라우드를 확보해야 우리의 정보가 우리나라 안에서 잘 저장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과 연관되는 이야기죠.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전략 자원을 원하는 만큼 바로 얻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점입니다.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으니 더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량의 AI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는 지금도 갖추기가 힘들어요. 많은 기업과 학교에서 AI용 하드웨어인 GPU, AI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2027년까지 GPU를 3만 개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뒤로는 5만 개, 10만 개를 확보해 나가야겠죠. 현시점의 가장 강력한 GPU를 적어도 몇만 장 이상은 보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국가 차원의 구매력으로 대량의 GPU를 확보한 뒤에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 센터를 특정 기업에게 맡기는 대신 정부 자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유념해야 할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한다면서 여러 기업에게 똑같은 숫자의 GPU를 배급하듯이 분배하면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100점짜리 AI에 근접하는 95점짜리 AI를 만들어 보세요. GPU는 정부에서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지원하고, 만들어진 AI는 오픈소스로 풀어야 해요. 그러면 국내의 스타트업들이 그 AI를 바탕으로 수많은 시도를 해 볼 수 있잖아요. 기업이 공공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AI 1위 국가를 향한 꿈

하정우 ▪ 인공지능 기술을 만드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간은 이제 2년쯤 남았다고 봅니다. 내년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질문자 ▪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남았나요?

하정우 ▪ 그사이에 따라잡지 못하면 80점짜리 AI를 쓰면서 다른 나라에 묻어가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90점짜리 AI를 만들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실망하고 그만두는 대신 수년 동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질문자 ▪ 미국의 자리를 넘볼 수는 없더라도 세계 2등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혹시 1등도 노려 볼 만한가요?

하정우 ▪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뭐든 규모가 커서 따라가기는 당연히 힘들겠지만,꿈은 원대하게 꾸는 것도 좋죠. 3등을 목표로 삼으면 잘해 봐야 3등이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1등이 되지는 못해도 세부 분야에서는 최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AI 개발 골든 타임, 앞으로 2년. 우리나라는 세계의 선두에 설 수 있을까?

아직도 〈리틀 포레스트〉꿈꾸며 시골에 오신다고요? 청년 농부가 말하는 농촌 현실

OPQR_긍정 농부 차정환
전북 김제에 거주 중인 5년 차 청년 농부,
‘긍정농부차씨’ 대표

질문자 ▪ 와, 평야 한가운데에 사무실이 있네요!

차정환 ▪ 지금처럼 연초가 되면 여기에 앉아서 사업계획서를 쓰고, 여러 지원사업에 응모하면서 하루를 보내요. 사실 농한기에는 최대한 쉬는 게 최고인데, 이 시즌에는 올해 진행될 사업들이 하나둘 나와요. 누가 저를 챙겨 주지는 않으니까 제가 챙기지 않으면 놓치거든요.

질문자 ▪ 올해는 사업계획서를 몇 개쯤 내 보시려고요?

차정환 ▪ 5개 정도 넣어 보려고요.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계속 안 되고 있지만요. 올해는 사업계획서를 더 잘 써 보려고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 이런 마음이에요.

질문자 ▪ TV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하셨죠.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셨나요?

차정환 ▪ 작년에는 〈전국노래자랑〉에 나갔고요,〈인간극장〉, 〈6시 내 고향〉, 〈아침마당〉, 〈2TV 생생정보〉, 〈생방송 오늘 아침〉, 〈TV 유치원〉 촬영도 했어요.

질문자 ▪ 〈TV 유치원〉에는 왜 나가신 거예요?(웃음)

차정환 ▪ 어린이들한테 농업이 어떤 일인지 설명해 줬어요.(웃음) 방송에 출연한다고 해서 제 사업이 잘되는 건 아니에요. 김제에서 열심히 농사짓는 청년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린 것 같아요. 그게 제 목표였어요.

당장은 잘되는 게 많지 않지만 될 때까지 해 보겠다는 긍정 농부

질문자 ▪ 혹시 오늘의 일상 중에 정환 씨가 농부 같아 보이는 순간이 있을까요?

차정환 ▪ 그럼 사무실 밖으로 나가 볼까요? 농부다운 모습을 보시려면 4월에 오셔야 해요. 4월부터 12월까지 엄청 바쁘거든요. 지금은 목이버섯 재배가 거의 끝난 상황이고, 내년 봄에 날씨가 일찍 풀리면 조금 더 수확할 예정이에요.

질문자 ▪ 저는 버섯 재배를 하신다길래 나무에 버섯을 심어서 키우시는 줄 알았어요.

차정환 ▪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기 재배사 안에 있는 노란 기둥이 다 나무예요. 톱밥을 압축해서 기둥 형태로 만든 거죠. 지금은 기둥을 매달아 뒀는데, 올해는 철사에 꽂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훨씬 더 많은 기둥을 넣을 수 있어요.

질문자 ▪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차정환 ▪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쓰고 있어요.

질문자 ▪ 농사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네요.

차정환 ▪ 이 버섯 재배사, 저 바깥의 땅, 다 대출받아서 샀어요. 모든 시설을 할부로 구매했어요. 비닐하우스, 트랙터, 재배사에 설치돼 있는 파이프 하나하나까지 다 할부로 산 거예요. ‘풀 할부’ 시설이죠.

열심히 벌어서 빚 갚으며 버틴다

질문자 ▪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재산이 얼마였는지 공개 가능하세요?

차정환 ▪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24살이었어요. 군대 전역하고 학교 졸업하자마자 왔거든요. 그때의 저한테는 200만 원도 엄청 큰 돈이었어요. 부모님이 농사짓는 분들이 아닌데 청년 혼자 농촌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보통 비슷한 처지일 거예요. 이게 귀농의 현실이고 청년농의 현실이에요.

질문자 ▪ 200만 원 이상의 나머지 비용은 전부 대출받으신 거예요?

차정환 ▪ 네. 작년까지는 빚이 6억 원 넘게 있었어요. 이제는 5억 원대 후반으로 떨어졌죠. 열심히 일해서 메꿔 나가고 있어요. 1년에 트랙터 할부금을 1800만 원씩 내요. 이자 300만 원, 기름값 500만 원, 경영비 1000만 원 갚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조금 남은 돈으로 생활하고 내년 농사 준비하는 거죠.

질문자 ▪ 수익이 너무 적지 않은가요?

차정환 ▪ 당장 수익이 없다는 데 신경을 썼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 차에 여기를 떠났어야 해요. 당시 순수익이 350만 원이었거든요.

질문자 ▪ 1년 순수익이 350만 원이었던 거예요?

차정환 ▪ 예. 그런데 저는 어려울 거라는 걸 예상하고 왔거든요. 그동안 포잡, 파이브잡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필라테스 강사 일도 하고, 유튜버 활동도 하고,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따서 그 일도 했어요. 트랙터 기사에 용역 일까지 했죠. 농사로는 단기간에 소득을 낼 수가 없으니까, 시골에서 버텨야 하니까요.

부모님이 “야, 5000만 원 가져가서 써.”라고 하셨다면 감사했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가 매월 쓸 돈을 만들기 바빴어요. 밖에서 보면 농부들은 일하다가 중간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낮잠 좀 자 가면서 여유롭게 지낼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종일 일만 해야 해요. 살아남으려면.

질문자 ▪ 〈리틀 포레스트〉를 꿈꾸고 왔다가는….

차정환 ▪ 큰코다치죠. 삶의 질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랄까요. 3D 업종에 가까워요. 사람보다는 농작물을 우선해야 하거든요. 한여름 땡볕이 내리쬔다고 해서 재배사를 시원하게 해 둘 수는 없어요. 폭염주의보가 문제인가요. 약통 메고 나가서 약 쥐약 하는데. 농작물을 살려야죠. 여름에 냉방병 걸려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웃음)

워라밸을 챙기고 싶다면 회사에 다니는 편이 나아요. 쉬고 싶을 때 쉬는 건 고사하고 제때 밥 먹는 것조차 힘들어요. 이틀에 한 끼 먹어 가면서 일만 할 때도 있어요. 농사일에 퇴근이 어디 있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고,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못 자기도 했어요.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해야 하는 노력이 있으니까요. 친구들 안 만나고 농사만 지으니 하루에 쓰는 돈이라고 해 봐야 1000원, 1500원이에요. 커피 한 잔 사서 마시면 끝인 거죠.

질문자 ▪ 돈을 쓸 시간이 없는 거네요.

차정환 ▪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주변에 있는 선배들, 혼자서 맨땅에 헤딩한 형님들을 보면 다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버티기는 힘드니까, 농사지으러 왔다가 망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도 농업이 좋은 이유

차정환 ▪ 청년 농부들이 겪는 문제는 이런 식이죠. 가령 3억 원을 빌려서 목이버섯 하우스를 지었어요.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한 거라 5년 동안은 이자를 잘 냈어요. 6년 차가 되면 하우스가 노후화돼서 고쳐야 하는데, 원금을 갚아야 할 시기가 오는 거예요. 목돈이 나가겠죠. 자본 순환이 안 돼서 원금 상환에 실패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경영비가 안 나오니까요. 제가 이제 5년 차라 내년부터는 원금을 갚아야 해요. 걱정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업 컨설팅을 해 주는 분들도 다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버텨라. 그럼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분들한테도 뾰족한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버텨서 잘사는 선배가 둘 있는데, 꿈을 펼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 성공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힘들어도 제가 농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하겠다는 사람도 정부에서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농업은 없어서는 안 될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결코 망하지 않는 산업이다.’ 저는 그 생각으로 여기에 왔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길이 열릴 거라고 믿었죠.

질문자 ▪ 그렇다면 청년 농부 차정환 씨는 요즘 어떤 질문을 품고 계신가요?

차정환 ▪ ‘청년농을 늘리는 게 좋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지원정책도 있고 해서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데, 제대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힘드니까요.

‘청년농의 삶의 질은 언제까지 이렇게 낮아야 하는 걸까?’ 싶기도 해요. 내 삶의 질은 언제쯤 좋아질지, 농부의 삶의 질은 누가 책임지는 건지 묻고 싶어져요. 시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정도로 에너지를 쏟았다면 더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농부가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

신생아 필수품, 아기 전용 제품들, 정말 다 필요한 것 맞나요?

OPQR_영국 아빠 다니엘
21년째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작가, 전 외신기자,
현 아리아 아빠

질문자 ▪ 한국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다니엘 ▪ 2002년 월드컵 때 관광객으로 처음 왔어요. 진짜 신났고, 모두가 제 형제자매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한국의 매력에 빠져 가지고, 졸업하고 나면 또 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2004년에 다시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영어 강사로 일했고 그다음에는 금융회사에 취직했는데, 좀 힘들어져서 결국 영국으로 돌아갔죠. 거기서 석사를 취득… ‘취득’이 맞는 말인가요?

질문자 ▪ 예, 맞는 말이에요.

다니엘 ▪ 요즘 한국말 진짜 못하게 됐어요, 옛날에 비해서.

질문자 ▪ 어, 왜 그럴까요?

다니엘 ▪ 육아 때문에요.. 요즘에는 뭐 ‘응가’라든가 ‘거기에는 기저귀 갈 데 있나?’ 이런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육아 용어는 너무 잘 아는데,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한국에 정착한 이유

질문자 ▪ 2002년 월드컵 때 본 한국은 너무 재미있는 나라였지만, 취업을 해 보니까 생활하기 쉽지 않다고 느끼셨던 거죠?

다니엘 ▪ 네. 속았죠, 사실.(웃음) ‘아, 진짜 경쟁이 심하구나.’ 싶었어요. 아이들 교육에 대한 압박도 영국보다 1000배는 더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질문자 ▪ 그런 모습을 봤는데도 한국에 정착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 ▪ ‘정 문화’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번 친구를 사귀면 평생 잘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음주가무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노래방 가고 술도 많이 마셨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20대를 보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 문화가 확 사라진 거예요. 허탈감이 좀 들었죠.

질문자 ▪ 그건 슬프셨겠지만 결혼을 하셨잖아요.

다니엘 ▪ 네, 그렇죠. 행복하게 발목 잡힌 거죠.(웃음)

아이를 키우면서 만나게 된 한국의 모습은?

다니엘 ▪ 한국에서는 아이 키우기가 ‘빡세다’고 생각해요. 일단 뭘 하든 기준을 굉장히 높은 곳에 둬요. ‘아이가 더울까? 추울까? 아플까?’ 하나하나 걱정하는 거예요.

질문자 ▪ 예민하죠.

다니엘 ▪ 엄청 예민해요. 예를 들면, 아기 옷 세탁기도 따로 있잖아요.

질문자 ▪ 맞아요. 그걸 꼭 들여놔야 하는 걸까요?

다니엘 ▪ 세탁기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죠. '왜 그래야 하지? 다 같은 세탁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기용 세제도 있어요. 당연히 비싸죠. 돈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싶어요.

질문자 ▪ 영국은 어떤가요?

다니엘 ▪ 작년 7~8월에 잠깐 영국에 가 있었거든요. 슈퍼마켓 가서 직원분한테 아기용 세탁 세제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영국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내 아이를 이 나라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질문자 ▪ 요즘 어떤 질문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니엘 ▪ '내 딸 아리아를 이 나라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한국 교육 문화에는 특징적인 면이 많아요. 핵심은 경쟁이죠. 제가 아내한테 '학교 다닐 때 내 옆자리 친구가 경쟁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더니 아내가 "진짜? 당연히 경쟁자인 거 아냐?"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문제가 경쟁에서 시작된다고 봐요. 생각해 보면 옆 사람을 경쟁 상대로 인식한다는 건 슬픈 일이죠.

질문자 ▪ 한국의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경쟁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거부감이 들 만하네요.

다니엘 ▪ 이건 서양식 사고방식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 경쟁이란 어제의 다니엘과 하는 거예요. 어제의 다니엘보다 오늘의 다니엘이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질문자 ▪ 지금은 아리아를 어떻게 키우고 계세요? 예를 들면, 아리아의 옷은 전부 사 주시나요?

다니엘 ▪ 산 것도 있고 물려받은 것도 있어요. 선물받은 옷도 있고요. 큰돈을 써야겠다, 아이용 명품 재킷을 사 줘야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웃음)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생각

질문자 ▪ 요즘의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다니엘 ▪ 아…. 마음이 힘들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질문자 ▪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도 '이 나라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인가?'라는 고민에 영향을 미치나요?

다니엘 ▪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아리아랑 동네 슈퍼마켓 가고 평범하게 살면서 정치문제를 떠올리지는 않죠. 그런데 계엄령 선포 장면을 봤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어? 이게 가능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다.'

질문자 ▪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그날 뭐 하고 계시다가 소식을 들으셨어요?

다니엘 ▪ 육아를 하니까 저희 가족은 일찍 자는 편이에요. 9시 반이나 10시에 자고 아침 5시 반이나 6시에 일어나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메신저 메시지가 줄줄이 와 있더라고요. 다 영국 친구들이에요. 계엄령이라니 뭐냐고, 질문을 엄청 많이 보냈어요. 나도 방금 일어나서 모른다니까 뉴스를 보래요. 그제야 확인하고 놀랐죠. "What?" 2024년 한국의 독재정치를 자느라 다 놓쳤어요. 3시간 동안의 독재를.

이런 상황이 요즘의 세계적인 정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도 지지율이 30%까지 반등하잖아요.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구나' 생각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가 정책을 살피고 뉴스를 보고 고민하던 문화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가 케이팝 팬덤 문화처럼 되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하든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유권자가 많아져서 좀 무서워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모두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전체 시스템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한국의 좋은 점

질문자 ▪ 아리아를 키우면서 느끼신 한국의 좋은 점은 뭔가요?

다니엘 ▪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초등학교에 갈 때까지의 시스템이 진짜 괜찮아요. 한국에 사는 외국 친구들 얘기를 들어 보면, 출신지가 어디든 다 그렇게 말해요.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너무 좋다고요.

질문자 ▪ 어떤 나라라면 만족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다니엘 ▪ 이 세상에 완벽한 나라는 없는 건데,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해요. A라도, B라도, C라도 괜찮다는 너그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나라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날씨가 좋은 나라였으면 해서, 영국은 탈락입니다.(웃음)

남의 시선보다 내 아이와 눈을 맞추고, 남과 경쟁하기보다는 너만의 길을 가라고 응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전국에 맛집, 가 보고 싶은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최소한 1층이라도 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OPQR_장애인권운동가 박김영희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대표

질문자 ▪ 세상 밖으로 나오시기까지 30년이 걸렸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박김영희 ▪ 제가 장애 인권 운동을 30대 후반에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까지 저는 제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학교에 들어가려니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입학을 했더라도 제가 학교에 가려면 가족 중의 누군가가 저를 업고 데리고 다녀야 했을 거예요. 저를 위해서 인생을 희생해야 했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을 못 했고 중학교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예 집 안에서만 살았죠.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사회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곗돈으로 휠체어를 사 주셨거든요. 바깥으로 나오면서 모임에 참여해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활동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대 초반에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갔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중에 인권 운동에 대해 알게 된 거예요.

박김영희가 장애인 인권 운동에 투신한 30년 사이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가 도입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었다.

박김영희 ▪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이동권 투쟁하실 때 같이 투쟁했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가족들이랑 어린이대공원에 가서 유아차를 밀게 됐는데, 무수한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안 유아차를 들고 이동했던 거예요.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이후로는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집에 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장애인분들만 엘리베이터를 쓰는 게 아니구나. 장애가 없는 나 같은 사람한테도 필요할 때가 있네.' 저희가 해 온 운동은 모두를 위한 거예요.

'나는 언제쯤 맛집에 갈 수 있을까?'

박김영희 ▪ 요즘은 먹방이 정말 많잖아요. 보다가 '저거 맛있겠다. 나도 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검색을 해요. 그리고 출입문 사진을 찾아서 막 확대해 보죠. 계단이 있는지, 턱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둘 중 하나가 있으면 포기해요.

질문자 ▪ 선생님 사무실은 혜화동 근처라 가까운 곳에 맛집이 많을 것 같아요.

박김영희 ▪ 사무실 친구들과 점심 먹으러 가끔 혜화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가는 곳이 서너 곳으로 정해져 있어요.

질문자 ▪ 혜화동 전체에 네 곳뿐인가요?

박김영희 ▪ 이 동네 안에서는요. 여기 건물을 보시면 2층에 칼국숫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2층으로 가는 입구가 어디인지 안내되어 있지 않고, 건물 앞에 턱이 있어요. 1층에는 카페가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해요. 그러면 둘 다 갈 수 없는 거죠.

질문자 ▪ 1층에 있는 가게라고 해도 입구에 계단이 있으면 가실 수가 없네요.

박김영희 ▪ 네. 건물 바깥에 턱이 없고 계단도 없어서 "와, 여기는 갈 수 있겠다." 하고 들어갔다가, 음식점이 2층에 있어서 "속았다." 하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웃음)

이쪽의 1층 편의점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실하고 가까운 곳인데 아직 가 본 적이 없어요. 입구 우측에 짧은 경사로가 있지만 그건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는 곳과 연결된 거예요. 편의점 입구에 문턱 경사로를 설치해 놓기는 했는데 정작 그 앞에는 계단이 있어서 경사로까지 올라갈 수가 없죠. 이렇게 어이없는 경우를 보기도 해요.

'1층이 있는 삶'이 절실한 순간은 언제?

박김영희 ▪ 매 순간 절실하죠. 밥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물을 한 병 사려고 해도, 뭐 하나가 필요해서 마트에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하나가 쉽지 않으니까요.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나? 우리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어요. 친구를 만났지만 어딘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길에서 차를 마시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오래 돌아다니면 허리가 아파요. 길바닥에 요철이 있으면 충격을 몸으로 받게 되니까요.

이런 경험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한번 바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8년에 '1층이 있는 삶' 소송을 시작했어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법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슈퍼마켓, 미용실, 경찰서 같은 곳에 경사로 같은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고요.. 지금은 50㎡ 이상의 시설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50㎡ 이하의 좁은 공간에는 편의점, 약국, 동네 미용실, 작은 카페가 들어서 있거든요.

질문자 ▪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곳들이네요.

박김영희 ▪ 그렇죠. 그런 곳에 접근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저희가 복지부의 소송대리인한테 물어봤어요. 정부는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요. 대답을 들어 보니 내용이 어찌나 소박하던지. 어떻게 저런 얘기를 결론이라고 내놓을까 싶더라고요.

생필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편의시설을 갖춘 대형마트를 이용하면 된대요. 활동 보조사를

통해서 대신 구매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변론을 듣고 나오면서 장애인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건전지 하나를 사려고 해도 백화점에 가야 돼.”, “물 한 병 하려고 할 때도 백화점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너무 고급지지 않아?”(웃음)

2024년,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 제한을 방치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다

질문자 ▪ 대법원이 국가에게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을 때, 동료분들이랑 다 같이 듣고 계셨죠. 같이 계셨던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박김영희 ▪ 법정에서는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도 자제를 시켜서요. 조금만 움직여도 주의를 줘요. 저희끼리 속삭이듯이 “우리 이겼어? 이긴 거 맞아? 아싸~” 이랬죠.(웃음) 서로 눈빛 주고받으면서요.

질문자 ▪ 조용한 승리였네요.(웃음)

박김영희 ▪ 대법원장님이 판결문을 읽어 주시는데, 내용이 아주 길었어요. 구절 하나하나에 절박한 우리의 이야기가 반영되어 있어서 큰 위로가 됐어요. ‘장애인에게는 불과 1cm의 턱도 1층에 이르는 것을 방해한다.’, ‘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사회가 투명 인간의 도시는 아닌지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받는다면 어디나 갈 수 있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닐 수 있다.’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죠.

우리 사회가 투명 인간의 도시로 남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박김영희 ▪ 몸이라는 건 계속 변하거든요. 점점 노화돼요. ‘언젠가 나이 들어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됐을 때, 나는 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누구나 한 번쯤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방에 가면 어르신들 다 스쿠터 쓰세요. 이동하기가 불편하시니까요. 고령화사회가 됐으니 그런 분들은 앞으로 꾸준히 늘어나겠죠. 모두를 위해서, 접근성을 조금이라도 더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한 이번 승소는 장애인만을 위한 일은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OPQR_경제 전문기자 김원장
작가, 전 앵커

박태웅 ▪ 어떤 질문을 갖고 오셨습니까?

김원장 ▪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입니다.

박태웅 ▪ 정말 와닿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행복도가 엄청나게 낮잖아요. 슬픈 얘기지만 자살률도 세계 최고이고요. 왜 그런 겁니까?

김원장 ▪ 사실 저도 별로 행복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피와 눈물로 민주화를 이뤘죠. 전 세계를 둘러봐도, 예전부터 잘살던 유럽 국가와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빨리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두고 기적을 이뤘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완성된 나라라고 봅니다. 어느 선진국에 가더라도 ‘아, 이런 건 우리나라가 훨씬 나은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국가가 그동안 펼쳐 왔던 정책들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향점을 달리해 보는 거죠. 그게 정치의 역할일 거예요.

국가는 부자가 됐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김원장 ▪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 알아보기 위해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점이 힘드세요?”라고 묻는다면 “출근하는 데 2시간이나 걸려요.”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서울과 수도권 도시가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어서 그렇죠. 도시계획을 그렇게 세웠어요.

서구 선진국 사람들의 출근 시간은 보통 1시간 내외거든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하루에 2시간을 더 버리는 거예요. 출퇴근을 1시간씩 더 오래 하니까요. 1년이면 거의 한 달을 버리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간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OECD 평균보다 거의 2달 더 일하고, 독일보다는 3달 더 일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항상 바쁘냐고 물으면 “매일 1시간을 이동하면서 날려 버려요.”라는 대답을 듣게 되는 거죠.

이 한 가지 질문과 대답 속에 노동시간과 수도권 집중 문제가 들어 있잖아요. 행복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주렁주렁 엮여 나옵니다. 늘 피곤한 생활은 “혼자 살래.”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요. 연애, 결혼, 출산, 육아를 하기보다는 이불 속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퇴근하면 집에 가서 혼자 넷플릭스 봐야지.’ 이런 삶을 추구하게 돼요.

박태웅 ▪ 일상이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김원장 ▪ 그렇죠. 이 문제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산업과 복지 지출을 구조조정한들, 사람들이 행복해질까요? 우리 사회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 … 평균임금은 4000만 원이 안 됩니다. (현대·기아차의 40% 정도)”

김원장 ▪ 시장 경제체제 안에서 살고 있으니 개인의 소득은 높아지는 게 좋죠. 그런데 2023년에 당시 노동부 장관이 광주형 일자리 기업에 다녀와서는 ‘이 회사 평균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40% 수준이다. 감동받았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정치인이 ‘당신의 소득이 낮아서 감동받았다’는 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 사회예요. 하지만 언론도 여론도 이 발언을 크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1970~1980년대에는 급여가 높은 건 나쁜 거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방직공장에서 일하고, 인형 만들어서 수출하고, 거리에 도로 깔고 그럴 때요. 그분이 학생운동 하던 시절이죠. 그때 이후로 생각이 멈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고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스웨덴의 버스 기사 연봉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아, 많이 받네.”라고 반응하지만 우리나라 버스 기사 연봉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운전하는 게 무슨 재주라고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라고 해요. 4년제 대학 나와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이 굉장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다 급여를 올려 달라고 파업하면, “간호사가 연봉 5000만 원을 받아? 그런데 파업을 해? 이런 빨갱이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스스로가 급여 인상을 부정합니다. 묘한 이데올로기예요. 자본주의 속에서 사회주의적인 망상을 하고 있는 셈이죠.

박태웅 ▪ 경제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어마어마한 문화적 지체, 생각의 지체, 심지어는 사회 전체적인 목표의 지체가 일어나고 있네요. ‘이미 흘러가 버린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우리가 향하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대단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김원장 ▪ 행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였을 때의 가치관을 유지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짓고, 짓고, 또 지은 끝에 다가올 미래는

김원장 ▪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택을 많이 공급한 시기가 1970년대, 그리고 1차 신도시를 개발한 1990년대였잖아요. 좋은 정책이었죠. 집이 부족했으니까요. 강남이며 신도시를 굉장히 번듯하게 만들고, 닥치는 대로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30~40년이 지났으니 그 집들을 고쳐야 할 때가 됐죠.

어떤 방향으로 고치고 있는가 하면, ‘건축비가 상승해서 아파트 높이가 낮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160%였던 용적률을 320%로 올려 주자’는 식이에요. 1기 신도시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높이는 모두 이런 이유로 높아질 겁니다. 가구 수가 많아지겠죠. 다 분양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올까요? 수도권 바깥에서 오겠죠. 지방은 더 비어 갈 테고 수도권은 더 과밀해질 거예요.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을 출퇴근에 쓰면서 피곤해할 겁니다.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이 방향이 맞는가?’ 지금으로부터 30~40년이 지나서 이번에 짓는 아파트들이 노후화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적률을 600% 정도로 올려야 할까요?

박태웅 ▪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질문이 그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슬럼화에 이를 것 같거든요.

김원장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조성된 지 오래된 도시를 재정비하는 일에 대한 법인데, 재정비 시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같은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개발 후 30년이 지난 택지가 적용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살피면서 기준을 낮췄어요. 이제는 개발 후 20년이 지난 택지가 적용 대상이 됐죠.

동탄 신도시 입주가 2007년에 시작됐거든요. 이제 18년 됐으니까 몇 년만 지나면 이 도시의 건물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용적률 혜택도 크게 볼 수 있고요.

박태웅 ▪ 동탄 신도시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재개발이 가능해졌네요.

김원장 ▪ 정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지금도 토지를 매입해서 신도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주택이 부족하다, 빨리 지어야 한다, 지금 짓지 않으면 3~4년 뒤 또 집값이 폭등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박태웅 ▪ 한편으로는 대단히 많은 지방 도시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죠.

김원장 ▪ 대전, 부산, 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의 원도심까지 텅텅 비어 가고 있습니다. 구도심에 집이 있는 국민들은 가만히 있다가 자산을 뺏기는 셈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새에 자산이 멍드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도 자꾸 신도시를 만들어요. 왜일까요? 이전 정부도, 그 전의 정부도 이 정책을 시행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GDP를 올릴 수 있고 건설사에게도 좋다는 거죠.

정부는 지난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지출을 해요. 자꾸 뭘 짓는데, 어떤 걸 짓는가 하면 완공한 뒤에 지자체장과 의원들이 그 앞에서 사진 찍기 좋을 만한 건물을 만듭니다.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경제가 어려운 것인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인가?

김원장 ▪ 제가 하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은 ‘경제가 어렵다는데 정말 그런가, 아니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인가?’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오셔서 병원에 가세요. 강남 터미널에서 어머니를 기다릴 때마다 주변 식당을 살펴보는데, 5년 전과 지금의 음식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곰탕 한

그릇에 만 원이에요.

반면, 백화점 VIP 기준은 계속 올라갑니다. 신세계백화점 VIP 다이아몬드 등급을 받으려면 한 해에 7000만 원 이상을 써야 해요. 블랙 다이아몬드 등급을 받으려면 1억 2000만 원 이상을 써야 하고요. 작년보다 VIP 등급 기준을 올렸는데도 VIP 고객 수가 늘었어요. 작년 루이비통코리아 매출액은 1조 70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명품을 많이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경제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KB금융지주에서 매해 「한국 부자 보고서」를 내는데, 저는 이 보고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격차에 대해 무관심하니까 민간에서 내놓는 거죠. 읽어 보면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2000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체 가계의 금융자산은 4800조 원 정도예요. 가계부채의 두 배나 됩니다. 이 자산의 58%, 2800조 원을 전체 인구의 0.9%가 갖고 있습니다.

박태웅 ▪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거네요.

김원장 ▪ 자본주의에서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금만 더 참고 성장을 위해 달려가자. 인내하자. 기업을 살리자.'라는 말을 모토로 삼았죠. 우리 스스로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에 수긍할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4.5일만 일해도 된다는 말을 못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2023년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백화점 단일 점포 중에서는 국내 최초로 연 매출 3조 원을 넘겼습니다. 2024년에는 롯데백화점 잠실점도 연 매출 3조 원을 기록했어요. 이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조금 더 참아야 해. 나라가 성장해야지.'라고 생각해요. 정치권에는 딸 생일 선물로 억대 시계를 사 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감세 정책을 펴면 우리 사회의 소비심리가 살아날 거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죠.

강남 터미널의 음식점 사장님은 왜 만 원짜리 곰탕을 강남 한복판에서 팔고 있는 겁니까? 2만 원을 받으면 좋을 텐데요. 터미널에 오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평에 가면 8000원짜리 짬뽕을 파는 집 천지입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착한 가격'이라고 말하는데 착한 마음으로 붙인 가격이겠습니까? 값을 올리면 팔리지 않으니까 그런 가격을 매긴 겁니다.

박태웅 ▪ '착한'이라니 지독한 표현이죠.

김원장 ▪ 격차가 이 정도로 벌어졌다는 걸 정치권에서는 모를 수도 있고, 눈감고 있을 수도 있겠죠. 분명한 건 한쪽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엉뚱한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국가 존재의 이유, '돌봄'

김원장 ▪ 2025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670조 원 규모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누가 아파서 누워 있지 않나? 식사를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살하려고 절벽 앞에 서지는 않았나?' 국가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해요.

박태웅 ▪ 요즘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사회 안정성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김원장 ▪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저학력자, 저소득자가 극우 세력에 동조하는 경향이 뚜렷해요. 당장 거리가 불타도 잃을 게 별로 없는 분들이죠.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회로부터 자기 몫을 공정하게 받지 못한 세력이 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바라는 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을 흔들어 보고 싶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 런던이 아니라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파리 근로자들의 급여가 런던의 1/2 수준이었거든요. 한 사회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들은 정치 성향이 우파든 좌파든 '나가서 깨 버리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야 하는가?

김원장 ▪ 맨해튼 8가에 있는 스타벅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 노숙자들이 그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미국에서는 마약용 주사기를 공짜로 나눠 주기도 하는 거 아시죠? 마약이 번지는 걸 막기 어렵다면 감염병이나 세균성 질환이 번지는 것만이라도 막으려 하는 거예요. 마약 투여에 쓰인 주사기가 그렇게 위험한데, 사람들이 그 주사기를 스타벅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스타벅스 직원들이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찔리는 일이 자꾸 일어났죠. 직원들이 마약용 주사기 쓰레기통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 본사에 요구했어요. 그래서 미국 스타벅스 일부 지점에는 주사기 전용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큰 목적 중 하나가 돌봄인데, 미국은 실패한 거죠.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유럽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앞서가고 있거든요. 미국은 잘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캘리포니아주의 GDP가 영국 전체의 GDP를 넘어선 지 한참 됐어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독일 전체 시가총액의 2배 이상입니다.

'경제성장' 하면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170조 원이에요. 이 방향으로 뛰어가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야 합니까? 따라가야죠. 미국에 투자도 해야 합니다. 미국이 얻는 과실의 일부나마 가져와야죠.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뛸 때 뛰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방향은 생각하면서 뛰었으면 좋겠어요.

행복의 조건 세 가지

질문자 ▪ 개인적인 행복의 기본 조건을 세 가지만 들자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김원장 ▪ 요즘 제가 자주 생각하는 문제예요. 일단 건강과 소득이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건강 지킨다면서 맨날 산에 가고, 헬스클럽 가서 운동해요. 돈 버는 일이야 아주 익숙하니까요. 늘 열심히 뛰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뭘 해야 행복한가'라는 질문의 답을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 답을 찾지 못하면 방향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은퇴를 했잖아요. 갑자기 회사를 나오게 됐는데, 방향을 자꾸 잃게 돼요. 요즘 와이프랑 허구한 날 "여보,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지?" 이러고 있어요. 미래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태웅 ▪ 저는 안전을 첫 번째에 두고 싶어요. 생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요. 두 번째 조건은 의미, 혹은 목적, 가치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네요.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서요. 세 번째 조건으로는 유대와 연대를 꼽겠습니다.

자녀가 살았으면 하는 나라의 모습

질문자 ▪ 두 분 모두에게 자녀가 있으신데, 자녀분들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김원장 ▪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자식을 길러 보니까 우리 세대와는 다른 점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박태웅 ▪ 저도 우리 애들도 다 우리나라에서 살지만, 사실상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개도국에서 태어났고 우리 애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이분들은 선진국 시민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개도국 사람은 가끔 반성하게 되죠. 앞서 해 주신 말씀과 비슷한데, 선진국 시민분들은 남의 기준을 확실히 덜 의식해요.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세대 입장에서 보면 눈치를 덜 봐요.

김원장 ▪ 저희 세대는 아버지 눈치 보고, 부장 눈치 보고, 친구들 눈치 보느라 자신이 원하는 걸 많이 하지 못했어요. 제 딸과 아들은 가끔 부모 눈치도 안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야 서운하긴 하지만.(웃음)

질문자 ▪ 자녀분들의 삶의 태도를 볼 때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박태웅 ▪ 훌륭하다고 생각하죠. '역시 선진국 시민은 다르구나.' 하지만 그 친구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요. 사회 전체가 워낙 서로를 괴롭히는 구조로 짜여 있어서, 아무리 선진국 시민이라 하더라도 사회 전체가 가하는 압력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사회 전체가 시선의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나 싶어요. 언제까지 '잘살아 보세'를 구호로 삼아야 하나요? 우리는 "왜 성장하는데?"라는 질문에 "성장하고 싶어서요."라는 대답밖에 못 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 '성장'해야 하는가?

전라도나 경상도나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지방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다 똑같지 않나요?

OPQR_귀촌 청년 김형수
충남 홍성에 거주하는 귀촌 4년 차 청년

김형수 ▪ 서울에서 살다가 2021년에 귀촌했어요. 저는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농촌이 좀 더 편해요. 도시의 빠른 속도, 치열한 경쟁이 저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 서울에서 살던 시절 출근길에 마을버스를 탔는데, 사람들한테 너무 치이는 거예요. 문득 돌아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질문자 ▪ 다들 그러지 않나요?

김형수 ▪ 그렇기는 한데, '길지도 않은 삶을, 굳이 아침부터 인간을 미워하면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갔거든요. 또래들은 대부분 주식 아니면 부동산 얘기를 해요. 재테크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저는 거기서 의미를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홍성으로 내려온 결정적인 계기는 집 문제였어요. 2019~2021년 사이에, 제가 살았던 강서구 화곡동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기범 중 한 사람은 제가 살고 있던 집의 소유자이기도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했는데, 다음 날에 집주인이 그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저는 다행히도 위기를 잘 넘겼어요. 보증보험을 잘 들어 놓은 덕분에. 그런데 제 친구들은 전세 사기로 큰 빚을 짊어지기 시작했어요. 타인의 생계를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말도 안 되는 탐욕이 판치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원래 도시를 좋아하지 않으니 빨리 떠나야겠다.

도시와 달라서 좋았던 농촌, 이곳에서의 삶이 지속 가능할까?

김형수 ▪ 홍성이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발상지거든요. 오리농법이 시작된 곳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좋은 마을이라 도서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레드락을 마실 수 있는 맥줏집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처럼 평생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질문자 ▪ 지금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면, 왜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으시는 건가요?

김형수 ▪ 이 지역이 변하고 있거든요. 저희 마을의 옆옆 마을에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18홀 골프장에 휴양 시설까지 짓는대요.

질문자 ▪ 개발이 이루어지는 건 호재 아닌가요?

김형수 ▪ 그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홍성이 발전하는 거래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살지는 않지만 이 지역의 땅을 갖고 있거나, 골프를 치거나, 골프 치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물품을 파는 사람들이겠죠.

동네 사람들은 다 반대해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 개발 이익을 얻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돈 버는 게 더 나은 삶이라고 말하면서 골프장 건설을 용인하라고 하느냐?'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죠.

질문자 ▪ 그런 식의 탐욕이 싫어서 여기로 오셨는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네요.

김형수 ▪ 그렇게 됐죠. 농촌에 있는 산을 깎아 내서 골프장을 만드는 게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요. 그 골프장 문제는 옆옆 마을의 일이지만, 제 생활 반경도 언제든 개발의 논리로 침탈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의 좋은 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자원 순환 시설'의 진실

김형수 ▪ 저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해요. 예를 들면 폐기물 매립장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데 뒤늦게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해야 햐냐고 물어보세요.

질문자 ▪ 폐기물 매립장 같은 시설을 만들기 전에는 주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나요?

김형수 ▪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주민들한테 정보를 자세히 알려 주지는 않아요. 이런 식이죠. 누군가 우리 동네에 '자원 순환 시설'을 지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 주민들은 '아, 재활용 시설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죠. 젊은 사람이 좋은 일 한다니까 좋은 일이겠거니 해요. 그래서 토지 사용을 승낙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나중에 설명을 들어 보면, 지하로는 25m 깊이로 파 들어가고 지상으로는 30m 높이로 솟구치는 건물 안에 산업폐기물을 넣는다고 해요.

진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시설 건립을 막을 수는 없어요. 사업자 측에서는 '아, 반대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 네 의견 들었어.' 하고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 의견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지만, 의견을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주민들은 괴롭죠. 우리 동네 쓰레기를 매립한다면 참아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질문자 ▪ 산업폐기물이란 어떤 걸 가리키는 건가요?

김형수 ▪ 폐콘크리트, 화학용품 찌꺼기, 하수 슬러지 같은 것들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충남에서는 친환경기업이라고 알려진 기업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다섯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이 지으려고 하는 거겠죠. 최근에 한 업체가 당진시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지으려고 인허가를 받았는데, 그 업체의 지분 50%를 어떤 사모펀드 측에서 2500억 원 정도에 샀다고 해요.

전국의 산업폐기물 관련 분쟁 지역은 무려 27곳

김형수 ▪ 주민분들은 대부분 사업이 70~80% 진행된 뒤에야 우리 동네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아시게 돼요. 서류상 절차는 다 끝나고 삽 뜨기 직전에 이르러서야.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질문자 ▪ 단순히 '내가 사는 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게 싫다'는 논리가 아니네요.

김형수 ▪ 저는 존중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크게 작용한다고 봐요. 한 사람의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분노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고,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갖지도 못했잖아요. 당사자들에게 결정 권한을 주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 둬야죠. 그런 장치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지역이기주의라는 말을 꺼낼 수는 없어요. 농촌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질문자 ▪ 사업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네요.

김형수 ▪ 사람들을 투사로 만들죠.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싸움꾼으로 만들어요. 농촌에 사는 분들은 거의 고령이잖아요. 대부분 70대 이상이시거든요. 잘 보이지도 않는 크기의 글자가 빼곡한 행정 문서를 바리바리 싸 들고 오세요. 온갖 행정 용어들 때문에 제가 읽어도 어려워요. 군청 쫓아가고 시청 쫓아가도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저 할머니 할아버지, 떼쓰러 왔네.'라는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 거예요. 악성 민원인 상대하듯이.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질문자 ▪ 그분들이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김형수 ▪ 주민의 편에 서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바꿔 주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정치인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지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건 당을 초월한 문제예요. 전라도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 많잖아요. 민주당이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정당이라면 전라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죠. 실제로는 다른 곳과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경상도도 마찬가지예요.

폐기물 관련 업체의 후원을 많이 받은 국회의원들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의원만큼이나 민주당 의원 숫자도 많아요. 로비 문제가 달려 있으니 폐기물 문제에 대해 주민들 편에 서는 당론을 채택하기는 어렵겠죠. 정치 세력에 최악·차악·차선·최선이 존재한다면 최소한 차선 정도는 되는 세력을 만나고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차악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괴로워요.

질문자 ▪ 지금 정말 예의를 갖춘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수 ▪ 그럼요. 저잣거리였다면 더 험하게 말했겠죠.(웃음)

질문자 ▪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김형수 ▪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면 조금이나마 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신 거잖아요. 이 자리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으려 하는 것과 아예 듣지 않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지역 개발에 주민의 목소리가 담기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청년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나요? 먹고사니즘은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닌가요?

OPQR_사회 정책학박사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태웅 ▪ 이승윤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동아시아 복지 생산 체제와 비정규직에 대한 비교 연구'로 옥스퍼드대학교 바넷 연구상과 국제 공공정책 분석 및 관리 학회 최우수 박사학위상을 받으셨습니다. 2023년에 영문판으로 내신 책 「불안정노동의 다양성: 액화 노동과 복지국가 한국의 노동자 보호 실패(Varieties of Precarity: Melting Labour and the Failure to Protect Workers in the Korean Welfare State)」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이 책으로도 연구상을 수상하셨어요. 엄청난 분입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건가요?

이승윤 ▪ 문제가 많지만 하나를 고르자면, 일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를 제도가 좇아가지 못해서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노동자들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노동권이나 사회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로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박태웅 ▪ 일의 형태가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고, 기술 발전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데 제도는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이승윤 ▪ 이런 상황에 노동이란 무엇이고 직업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묻는다면 세대, 소득,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노동이란 무엇인가?

이승윤 ▪ 일자리라는 건 여러 직무의 조합이잖아요. 가령 교수라는 제 직업은 강의, 연구, 행정 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의 조합이죠. 이제는 각 업무가 별개의 직업으로 쪼개지고 있어요. 자본과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추출이 훨씬 더 쉬워졌어요. 필요한 것만 뽑아 쓰고, 필요 없는 건 쓰지 않을 수 있게 됐죠. 이렇게 된 것이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쪼개진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아직 법 제도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박태웅 ▪ 일자리를 해체해서 미세 일감으로 나눴고, 플랫폼을 통해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사서 쓰는 형태가 됐네요. 노동자들은 필연적으로 정규직이 아니라 일감을 받아서 수행하는 프리랜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4대 보험에서는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거죠.

이승윤 ▪ 사적인 부담이 훨씬 커져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주 2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단 풀타임 근무가 아니라는 점이 예전과는 달라진 점이고요. 기술 발전을 통해 업무가 어떻게 쪼개지는가 하면, 카페 아르바이트 앱이 생겨서 A 카페에서 5시간, B 카페에서 5시간… 이런 식으로 5시간씩의 일감이 딱딱 뜨는 거예요.

박태웅 ▪ 작은 일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네요.

이승윤 ▪ 네. 비정규직의 업무보다 더 잘게 쪼개져요. 카페 사장님들은 아마 가장 일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와 줄 사람을 구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노동자는 어느 카페에 가든 업무 강도가 제일 높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게 돼요. 여러 카페를 다녀야 하니 이동의 문제도 있고요. 노동자가 아프다고 하면 사장님이 "아까 다른 카페에서 일하다가 몸이 안 좋아진 거지, 우리 탓은 아니야."라고 말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예전의 표준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르죠. 고용주가 모호해졌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일정하지 않다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변화의 맨 끝에는 플랫폼 노동, 업무가 그보다 더 쪼개진 클라우드 워크가 있어요. 그 사이에 프리랜서 노동이 존재하는데 누군가는 프리랜서이면서 플랫폼 노동자이기도 하죠. 교차가 가능하니까요. 현재의 일과 직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개념과는 아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액화 노동(melting labour) ▪ 전통적인 고용 형태를 벗어난 불안정한 노동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SNS 크리에이터 등의 노동이 이에 해당

이승윤 ▪ 농경시대의 노동과 산업화시대의 노동은 서로 다르잖아요. 산업화 시기에 규격화와 표준화로 생산성을 극대화했는데, 그때 노동 관련 법제와 사회보장 법제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복지국가 개념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박태웅 ▪ 노동조합도 그때 처음 조직됐죠.

이승윤 ▪ 맞아요. 그 제도들은 산업화시대 당시의 노동을 전제로 해서 생겨난 거예요.

박태웅 ▪ 기술 발전에 따라 일자리들이 불가피하게 미세 일감으로 해체된다면, 이건 결국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잖아요.

이승윤 ▪ 모든 일자리가 완전히 액화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액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이라고 생각해요. 표준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일하시는 분들은 육아휴직을 쓰실 수도 있고 병가를 신청하실 수도 있죠.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니까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근로기준법 바깥의 노동자가 죽 늘어나고 있어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 중 누군가는 기존 제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노동자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액화 노동을 하게 되겠죠. 청년들이 그렇게 갈라진다는 점을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원하는 일을 찾기 어려워 쉬고 있는 청년, 10명 중 3명

이승윤 ▪ 청년 문제는 이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청년 세대가 모두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

세대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건 매우 1차원적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진단입니다.

박태웅 ▪ 청년 세대 사이에서 중간층이 사라지고 극단적인 U자형 배치를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와 소득이 지극히 불안정한 집단과 안정적인 직장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집단이 양쪽 끝에 존재하고 가운데가 갈수록 비어 가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막연히 '청년들이 다 고생하는구나. 처음으로 아버지 세대보다 가난해지는 세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사실은 '청년'이라고 한데 묶기 어려울 만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었네요.

이승윤 ▪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양쪽 끝에 자리하는 청년들의 인생 경로는 점점 달라지겠죠. 자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은 긴 시간 동안 시험공부를 하거나 기술 습득을 하면서 노동시장 진입을 유예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어요. 반면 일단 아무 일자리에든 들어가야 하는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호한 실업 상태를 지속해 나가야 하죠.

'경력 있는 신입'을 요구하는 사회

박태웅 ▪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교육비를 다 개인이 부담하잖아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지면 학원에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배우는데, 그동안 학원비는 본인이 내죠.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준비 기간이 필요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그룹에 한번 속하면 나오기 힘드니까 어느새 자신의 계급이 결정되는 거죠.

이승윤 ▪ '숙련 형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자들, 특히 청년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국가별로 다르거든요. 각각을 유형화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는 기업에서 많은 책임을 지는 유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짧게나마 대졸자를 대상으로 OT를 진행하면서 훈련을 시켰죠.

박태웅 ▪ 기업들이 신입 사원을 정기적으로 뽑던 시절에는, 그 친구들이 제대로 일하게 되려면 3년이 걸린다고들 했어요.

이승윤 ▪ 그랬죠. 이제는 기업에서 신입 사원을 잘 뽑지 않아요. 경력직을 뽑은 지가 오래됐어요.

박태웅 ▪ 신입 사원을 교육하는 데 돈을 쓰지 않죠. '경력 있는 신입'을 구해요.

이승윤 ▪ 맞아요. 기업이 '숙련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다들 알아서 자신에게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오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금수저 혹은 흙수저론 같은 계급적 담론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헬조선'도 청년들이 모두 비관적이라 나온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논의를 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화살을 자신에게 돌린다는 점이에요. '다 내 탓이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만 있다면 각 개인이 능력을 개발해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계속 게으른 자신 탓을 하게 되죠.

노동자분들이 우리에게 공통의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면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워요. 원자화되고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하기가 힘들거든요. 가령 시간 빈곤, 소득 빈곤을 모두 겪는 이중 빈곤자들에게는 당장의 소득이 중요하잖아요. 이분들은 사회보험료 인상이나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세금 인상에 공감하기 어려워요. 노동자의 조직화,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운동이 우리 사회의 큰 과제예요.

청년의 불안은 우리 모두의 문제

박태웅 ▪ 지금의 일자리 문제가 청년들 개인의 탓이 아니라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승윤 ▪ 일자리 문제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회운동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개인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서로 생각을 나누지 않으면 추동력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런 점에서 작은 책 모임이나 동네 소모임 같은 곳에서 대화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이고 하고 있는 일의 형태가 무엇인지, 사회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3.3% 세금을 떼고 있는지,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노후 보장이 가능할지 얘기해 보는 거예요.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나누는 이런 대화가 커다란 운동의 시작점이 될지도 몰라요. 현재 큰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이 전체 청년을 대표한다고 봐도 좋을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주요 발화 청년들이 누구인지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청년들은 각기 다른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특정 이슈가 생겼을 때는 뭉치기도 하지만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때까지 공동 행동에 나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의 노동 문제, 계급화 문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해결해야 할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의 권리를 더 요구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좋은 일자리'란?

박태웅 ▪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는 예전보다 더 나은 삶,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기술 발전의 결과로 괜찮은 일자리들이 다 깨져 나가고 있으니, '이러려고 기술 발전을 했나?'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승윤 ▪ 기술 발전을 막지는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술을 인간적으로 활용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이미 몇 단계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의 기술은 노동자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쪼개진 노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출할 것인지에 골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박태웅 ▪ 저는 IT 업계에서만 수십 년 일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가 일감으로, 일감이 미세 일감으로 해체될 수 있는 건 자동화 때문이에요.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마이크로 매니징을 해 주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활용해야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이 흐름은 가속화되면 되었지 뒤집힐 일은 없어요. 산업화시대의 단순한 노동 구분은 이제 유효하지 않고, 그런 시대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이승윤 ▪ 지난 정부가 한 일 중에 심사숙고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던 부분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예요. 일의 형태가 변하고 있는데, 다시 예전의 형태로 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일의 형태가 달라지면 사회 문화와 개인의 인생관도 같이 달라지거든요. 이러한 변화에 맞게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퇴직하기 전까지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정규직만이 좋은 일자리일까요? 새롭게 만들어야 할 좋은 일자리란 어떤 일자리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발달장애인인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OPQR_예술가 정은혜
캐리커처 작가, 배우, 유튜버, 예비 신부

질문자 ▪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정은혜 ▪ 여기, 레지던시에 와서 동료들과 같이 그림 그려요.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근무하다가 동료들이랑 같이 점심 먹고, 누구 생일에는 파티도 해 주고, 다 같이 커피 마시고 하죠.

질문자 ▪ 제일 신나는 일은 뭔가요?

정은혜 ▪ 다 재밌죠, 뭐.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면서 먹방을 찍기도 하고요. 영남 오빠하고 데이트하는 것도 찍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질문자 ▪ 잘 지내시는 중인 정은혜 작가님은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신가요?

정은혜 ▪ 저도 영남 오빠하고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공간에서 '일하다 만난 사이'인 은혜 씨와 영남 씨. 단둘이서 지하철 데이트도 하고, 맛집 데이트도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중.

질문자 ▪ 영남 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정은혜 ▪ 일자리에서요. 영남 오빠가 2월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저를 좋아했고, 관심도 보였어요. 제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질문자 ▪ 고백은 누가 먼저 하셨어요?

정은혜 ▪ 오빠가 먼저 했어요.

질문자 ▪ 작가님께서 먼저 쪽지를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정은혜 ▪ 기억이 없어요. 몰라요.

질문자 ▪ 영남 님께서 먼저 좋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정은혜 ▪ 저한테 관심 있다고 좋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갑자기 "은혜 씨 작가님, 은혜 씨. 저랑 결혼해 줄 수 있어요?" 한 거예요.

질문자 ▪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은혜 ▪ 그냥 좋았어요. 사랑하니까.

최근엔 가족끼리 만나 상견례를 진행, 그리고 올해 여름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지인들이 함께 모여 약혼식을 올릴 예정.

질문자 ▪ 영남 님 얘기만 나오면 작가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좋으신가 봐요.

정은혜 ▪ 그렇죠.

질문자 ▪ 첫사랑이신가요?

정은혜 ▪ 첫사랑은 아니죠.

남들과 조금 다르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좁은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은혜 씨. 그런 그녀에게 그림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

정은혜 ▪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나서 남들보다 이상했어요. 제가 다운증후군 3급이에요. 말도 더듬고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서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사진 찍고, 그 사진 보면서 그림을 그렸죠. 많이 그렸어요. 가족, 고양이, 장애인, 커플들도 그려요. 아이들도 그리고요.

질문자 ▪ 혹시 지금까지 몇 명의 캐리커처를 그리셨는지 기억하세요?

정은혜 ▪ 2000명쯤 그렸나?

질문자 ▪ 포옹하는 사람들 그림이 많던데 이유가 있나요?

정은혜 ▪ 포옹을 좋아하고,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까. 사랑, 우정, 만남, 그런 의미의 포옹이죠.

드라마에 출연해 현실적인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은 은혜 씨

질문자 ▪ 〈우리들의 블루스〉에 같이 출연하셨던 한지민 배우 그림도 있죠?

정은혜 ▪ 그럼요.

질문자 ▪ 얘기가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어떻게 출연하시게 된 거예요?

정은혜 ▪ 제가 2006년에 영화 〈다섯 개의 시선〉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했고, 노희경 작가님이 그 영화를 보시고 저를 보고 싶어 해서 찾아오셨고, 그때 섭외 제안을 해 주신 거예요. 한지민 배우하고 닮지 않은 이란성쌍둥이 역할로 섭외를 해 주신 거예요.

발달장애인들도 평범하게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으려면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할까?

질문자 ▪ 작가님처럼 꿈을 가진 친구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정은혜 ▪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다 같이 동료들과 그림 그리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죽지 말고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일도 하면서 연애도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자 ▪ 작가님처럼요?

정은혜 ▪ 네.(웃음)

26살에 발달장애인 아이를 낳았습니다. 엄마인 제가 죽으면 은혜는 어떡해야 하나요?

OPQR_은혜 씨 엄마 장차현실
만화가, 레지던시 아트디렉터,
정은혜 작가의 매니저이자 은혜 엄마

장차현실 ▪ 사실은 저도 유명한 만화가였어요.(웃음) 1997년부터 2000년 중반까지 주로 시사만화나 장애와 여성과 관련한 만화를 신문에 연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은혜가 너무 유명해져서 은혜 엄마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요즘 저희 집에서 돈을 제일 잘 버시는 분이 정은혜 작가예요. 제가 딸카(딸의 카드) 쓰는 엄마입니다. 제가 그 카드 가지고 장을 봐 오면 은혜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요. 핸드폰 들고서 "또 뭐 샀어?" 하고 물어보는 거죠.

" 발달장애인은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죠?"

장차현실 ▪ 제가 눈을 감은 후에도 우리 은혜가 과연 당당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은혜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26살이었어요. 사실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애인을 본 거예요. 1990년대에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대부분 집에 갇혀 있거나 시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낳은 아이가 다운증후군 환자라는 거예요. 은혜가 3개월 정도 됐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고, 죽음을 생각하고 그랬죠.

돌아보면 은혜가 20~23살이었을 때가 은혜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은혜도 어리고 저도 젊고 건강했으니까, 은혜 한 사람 정도는 제가 충분히 케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혜가 20살이 된 이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은혜가 시간을 보낼 만한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복지관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너무 불편하다 보니 은혜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었어요. 직장도 없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 한구석에서 혼자 뜨개질을 하고 이불을 덮고 있었죠. 매일매일 동굴 속에서 있었어요."
(책 「은혜 씨의 포옹」 中)

장차현실 ▪ 그때부터 은혜가 정신적인 아픔을 겪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틱이 오더니 나중에는 조현병이 심하게 나타났어요. 혼잣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래층 아줌마가 민원을 넣는 거예요. 가족 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으면 다 같이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날을 보내다가 제가 은혜한테 제안했어요. "엄마가 너한테 30만 원을 줄게. 대신에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해." 은혜가 "그럴까?" 하더라고요.

청소일을 시작으로 세상과 맞닿기 시작한 은혜 씨, 이젠 어엿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장차현실 ▪ 자폐증이나 다운증후군 같은 발달장애를 겪는 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정신병을 같이 앓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언어 소통이 잘되지 않고 외모가 특징적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 속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관계가 단절되니까 퇴행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조현병이 오는 거죠. 조현병이 사회적 병이라는 얘기는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청년이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얼마나 건강하게 지탱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지금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업체에서 25~50세의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 30명이 일하고 계세요. 그중의 80%가 생애 처음으로 업을 갖게 된 분들이에요. 아침에 도시락 싸 들고 출근해서 오후 1시 정도에 퇴근하세요. 퇴근하고 나면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해 돌봄을 받고 저녁 6시쯤 집에 들어가시죠.

이렇게 되면 가족들의 생활이 달라져요. 그분 엄마의 일상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24시간 자식을 들여다보고 있던 엄마가 9시부터 6시까지 자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업도 갖게 됐어요. 발달장애인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 나머지 가족의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발달장애인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사실상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라고 말해요.

요즘 알콩달콩 행복한 연애 중인 은혜 씨와 영남 씨

장차현실 ▪ 영남 씨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일에 '만난 지 딱 1년 됐다'고 은혜가 얘기해 줘서 알게 됐어요. 경기 양평에 있는 '양평천사의집'이라는 시설에 계시는 분인데, 그곳에서 여기로 세 분이 오셔서 같이 일하게 됐거든요. 그때 눈이 맞은 거예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영남 씨가 여기 오기 전에 드라마에 나오는 은혜를 보고 보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있는 동안 둘이 꽁냥꽁냥하더니 작년 가을쯤에 둘 사이에서 결혼 얘기가 오간 거예요.

저는 둘이 좋아하고 데이트하고 이런 건 오케이였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을 때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영남 씨는 42살이고 은혜는 34살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것 같지 않아?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결혼은 한번 해 봐야지." 그 말이 제 걱정들을 와르르 무너뜨렸어요. 결혼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제 걱정보다 훨씬 상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말에 동의했죠. 이후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해결하자고 마음먹었어요.

발달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장차현실 ▪ 은혜가 아침에 일어나면 앞에 활동 지원 선생님이 계세요. 은혜가 씻고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계속 옆에서 도와주시고 도시락도 챙겨 주세요. 아침 9시까지 은혜를 직장에 데려다준 다음에 퇴근하시죠. 그다음에는 일자리에서 근로 지원 선생님이 케어해 주세요. 1시에 업무가 끝나면 주간 활동 선생님이 저녁 6시까지 은혜를 봐 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6시까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남편이 은혜한테 가족 없이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은혜가 "국가가 있잖아요."라고 대답하더라고요.(웃음) 만약 26살의 제가 장애인 아이를 낳았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괜찮아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어서, 너무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라고 말해 줬다면 당시에 그 정도로 절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바람은, 장애인이 수혜자로서 혜택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일하면서 자기 성장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국가가 정책의 초점을 그런 방향으로 맞춰 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육이 윤석열을 키워 냈을지도 모른다?! 파시스트를 키워 내는 교육,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OPQR_중앙대 교수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문과 교수, 중앙대학교 독일유럽연구센터 소장

김누리 ▪ 제가 소장으로 있는 센터에서 매년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국 학자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사실 컨퍼런스에 참석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져요. 우리나라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이 느껴져서요. 이들은 어떤 점에서 우리나라를 높게 평가할까요? 이분들이 우리 사회를 높이 평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K컬처가 아니라, 바로 민주주의예요.

제1강 한국,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

김누리 ▪ '아시아에서 어떻게 이런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느냐, 경이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토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거예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서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평화적으로 비판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법적으로 탄핵을 의결하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받아들여 인용을 했죠. 이 일련의 과정은 민주주의가 정석대로 구현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건데, 우리는 몰랐죠. 이런 사회 안에 있는 입장이니까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희망이에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나라의 국민들은 모여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택시 운전사〉, 〈1987〉 같은 영화를 함께 본대요.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민주주의를 구현할 날이 올 거야.' 이런 희망을 우리나라가 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그랬어요. "봐라,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광장이 그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4.19, 5.18, 6.10이 촛불 혁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이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5.18과 6.10은 사실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육군 소장들의 군홧발에 짓밟혔다는 뜻이죠. 4.19 때는 박정희가, 5.18 때는 전두환이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6.10의 성과는 노태우가 빼앗아 갔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이토록 위대하고, 동시에 이토록 허약할까요?

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위대하고도 허약할까?

김누리 ▪ 허약성의 원인이 뭘까요?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이죠. 윤석열이 12월 3일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엘리트들이 보인 행태를 떠올려 보세요. 정치인들, 법률가들, 고급관료들이 민주주의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거리낌 없이 늘어놨어요. 저는 그 발언들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지난 45년 동안 우리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다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민주주의의 성장을 가로막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저는 교실에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받으면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가 될까요, 아니면 위험한 파시스트가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이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제2강 한국 교실은 왜 파시스트를 길러 내는가?

김누리 ▪ '파시즘'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인물은 히틀러나 무솔리니죠. 파시즘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반민주적인 독재체제예요. 파시스트는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죠. 권위주의적 성격의 대표적인 특성을 보통 다섯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강자 동일시예요. 파시스트는 끊임없이 강자와 자기를 동일시해요. 두 번째는 약자 혐오예요. 계속해서 약자를 만들고 그들을 혐오합니다. 세 번째는 동조 강박이에요. 강박적으로 대세에 동조하려고 해요. 네 번째는 폭력성과 공격성이에요. 엄청난 수준의 폭력성과 공격성을 보여요. 다섯 번째는 흑백논리예요. 세상을 둘로 갈라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너무나 잘 들어맞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가 극복했다고 여겼던 파시즘적 세계관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는 걸 보여 준 사례예요. 극우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파시즘적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고, 선동가가 등장하면 그 잠재력이 금방 폭력으로 전환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죠.

우리 사회에 내재된 파시즘적 잠재력

김누리 ▪ 독일은 1970년에 교육 개혁을 했습니다. 당시의 모토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경쟁은 자연스러운 거잖아. 교육에서 경쟁을 안 시키면 뭘 시켜?' 독일 교육에는 일체의 경쟁이 없어요. 등수도 내지 않아요. 학교에서 우열을 나누는 행위를 아예 금지해요. 학교 간 경쟁도 없고 대학 입학시험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봐요. 90% 이상의 학생이 다 통과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 통과하면 원하는 대학의 원하는 학과로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까지 경쟁을 부정적으로 볼까요? 히틀러 때문이에요. 히틀러는 이 세계가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정글이라고 봤어요. 강한 자의 지배가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여겼죠. 경쟁, 우열, 지배와 복종이 파시스트의 핵심적인 세계관이에요. 민주주의자는 이 세계를 어떻게 볼까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봐요. 우열이 아니라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고,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죠.

우리나라에서 12년간 교육받으면서 전교 1등을 하는 모범생으로 성장했다면, 그 사람은 파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내란 사태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이 사회의 엘리트인데, 서울대를 나왔는데, 전교 1등이었다는데, 왜 그런 사람일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이 없을까?'라고요.

제3강 민주주의자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김누리 ▪ 독일에서는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첫째는 저항하는 능력, 둘째는 분노하는 능력, 셋째는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히틀러 시대에 사람들이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끔찍한 야만에 저항하지 않았고 히틀러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끌려가는 유태인들에게 공감해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못했죠. 그 결과 독일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독일은 히틀러 파시즘 시대의 잘못된 역사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반면 우리는 역사에서 배움을 얻지 못했어요.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이루었지만, 민주주의자를 길러 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어요.

민주주의의 고비마다 위대한 저력을 보여 준 건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시민, 바로 '우리들'

김누리 ▪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30년 동안 우리 사회에 파시즘의 잔재를 남겨 놓았어요. 우리의 사고방식, 생활 방식, 태도에 파시즘이 각인돼 있죠. 학교에 가면 경쟁 이데올로기에 휩싸이고 우열을 나누는 행태에 익숙해져요. 아이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못 하게 하잖아요. 문제집이나 풀라고 할 뿐이죠.

우리나라 교육은 아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는데, 그중 가장 끔찍한 것은 바로 '심연'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우물이 있어야 그 안에서 자아가 자라고, 정체성이 자라고, 나에 대한 인식이 자랄 수 있잖아요. 이 우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너무 표피적이에요. 자기 심연이 없는 표피적 인간이야말로 선동가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죠.

교육을 통해 정말 깊이 있는 사유를 하고 자기 나름의 개성적인 세계를 만들어 가는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만드는 것, 그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육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자취방에 살다 전세 사기 당하고, 청년 임대주택은 보증금이 비싸 못 들어가는 제가 대한민국 평균 30대 맞나요?

OPQR_청년 전성훈
평균 소득의 30대 직장인

질문자 ▪ 전성훈 님의 소득은 대략 평균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성훈 ▪ 평균에 속하겠죠. 중위소득보다는 높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질문자 ▪ 부족한 부분은 없지만,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성훈 ▪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당장 생활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뭔가를 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인 거죠. 제가 23살 때 '30세까지 3억 원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 정도면 차를 사고 전셋집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30대가 된 지금 3억이라는 금액을 보면 너무나 큰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자 ▪ 본가는 서울이 아니신 거죠?

전성훈 ▪ 네.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24살 때부터 쭉 자취를 한 거죠.

31세 평균남의 서울 주거 잔혹사 제1장,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한다.

전성훈 ▪ 최근에 집 구해 보셨어요?

질문자 ▪ 네, 작년 8월에 이사했어요.

전성훈 ▪ 지난 12월부터 서울 전월세 매물이 싹 말랐어요. 부동산에 가도 보여 줄 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살던 집이 작년에 전세 만기가 됐는데, 집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큰 불만도 없었거든요. 계속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연장 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하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어요. 24%의 갭이 생긴 거예요. 집주인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줄 보증금이 없다고. 진짜 큰일 났다 생각했죠.

제게는 보증금이 큰돈이지만 집주인한테도 그럴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보유한 부동산을 뒤지면 서울에서 내로라하는 동네의 집들이 나올 테고, 저는 죽어도 못 벌 돈이 나올 텐데 제 전세보증금을 왜 못 준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만기 시점이 되고 새 집을 구하려니까 정말 피 말리더라고요.

31세 평균남의 서울 주거 잔혹사 제2장, 내가 피해자인데 나더러 다 증명하란다.

전성훈 ▪ 2024년 3월에 보증금을 못 주겠다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어요. 그 뒤로 집주인이 7월까지 잠수를 탔죠. 사고 신청을 할 수가 없었어요. 7월이 되어서야 HUG에 사고 신청을 했더니 준비해야 할 서류 리스트를 보내 주더라고요. 준비하라는 서류를 다 모으면 책이 한 권 나올 거예요. 이 집과 계약했다는 걸 증명하는 데에만 5개의 서류가 필요하고 그 계약서 하나하나가 8장씩 돼요. 실제로 필요한 서류는 11종이고 모두 피해자가 준비해야 해요. 제가 피해자인데.(웃음)

서류를 마련해서 보내면, 어디 어디가 틀렸다고 법률적 용어로 도배해서 돌려줘요. 그게 1차 서류 보완 요청이었어요. 처음 그 피드백을 봤을 때는 진짜 와, '어쩌라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웃음) 정말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 했거든요. 다행히 어머니 친구분 중에 법무사님이 계셔서 여쭤봤죠. 답이 한 문장으로 오더라고요. "이것만 주면 돼." 법원은 A4용지에 엄청 긴 내용을 적어서 줬는데, 사실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걸 내니까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꼬이는 바람에 11월에 2차 서류 보완 요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마치고 나서는 담당자가 바로 배정되지 않아서 또 기다렸어요. 심지어 진행 상황에 대한 연락이 오지도 않아요. 12월에 보증금 반환 승인이 됐고, 이듬해 2월이 되어서야 보증금을 받았어요.

보증금을 못 주겠다는 집주인 통보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걸린 시간, 1년

질문자 ▪ 최근에 서울 화곡동을 중심으로 부동산 사기 사건이 크게 터져서 이슈가 됐죠.

전성훈 ▪ 그랬죠. 제가 당한 것도 사기예요, 사고가 아니라. HUG에서는 '보증 이행 사고'라고 표현해요. 어쩌다 보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거니까 사고래요. 이상하지 않나요? 사고라는 건 우연히,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발생한 일을 뜻하잖아요. 그 집주인의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건 제 돈을 다 써서 돌려줄 수 없게 됐다는 것이었겠죠. 쓰지 않았다면 바로 돌려줬을 테니까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연락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아무 불이익도 없어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100명 정도가 모여서 단체로 고소해야 겨우 처벌을 받아요. 한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면 사회가 이렇게 대답하는 상황이죠. "어쩌라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사례를 죽 보고 있으면, '전세금 먹튀, 왜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에요. 집주인들이 우리 또래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부담 없이 보증금으로 투자했다가, 잘 안됐을 경우에는 파산하면 그만이잖아요. "제 돈은요?" 하고 물어보면 "그렇게 됐다."라고 대답하겠죠.

31세 평균남의 서울 주거 잔혹사 제3장, 청년 주택 보증금이 1억 3000만 원?

전성훈 ▪ 이사할 집을 알아보다가, 혹시 민간 청년 주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희망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봤어요. 보증금이 1억 3000만 원에 월세가 75만 원 정도래요. 관리비에 공공요금을 더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빠지는 거죠. 큰 금액이 나간다는 게 분명한데도 거기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믿을 만한 사업자니까. 무조건 보증금을 줄 테니까. 전세 사기를 당할 일이 없다는 게 그 정도로 중요했어요.

하지만 제가 1억 3000만 원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대출받아야죠. 디딤돌 대출로 최대 7700만 원, SH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SH에서는 소득 요건만 보고 무이자 대출을 해 준대요.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4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이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마포에서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다니 괜찮잖아요. 이사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집을 보고 왔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큰일이 난 거예요. 대출이 안 된대요.

질문자 ▪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건가요?

전성훈 ▪ 예. 차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무이자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이 맞아야 해요. 월급이 348만 원 이하라면 무조건 무이자로 4000만 원을 대출해 준다고 했거든요. 와. 우리 엄마도 그렇게는 안 줄 텐데,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못 받았어요. 제가 겪은 상황을 주변에 말해 봤거든요. 제 주변에는 그 대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4000만 원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 골똘히 생각해 봤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세 사고를 당해서 목돈이 묶여 있는 상황이었고, 전세 대출을 했기 때문에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없었어요. 은행에 가도 대출 심사 자체를 아예 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청년 주택 입주를 포기하게 됐죠.

어떤 사람들이 그 주택에서 사는지 궁금했는데, 제 지인의 친구분이 거기에 사신대요. 대출을 받으셨냐고 물어보니까 저처럼 소득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럼 신용대출을 받으신 거냐고 했더니 오로지 본인 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감당하려면 300만 원을 겨우 넘기는 월급을 받고 있어야 하잖아요. "보증금 1억 3000만 원은 어디서 났니?"라는 질문에 "태어나 보니까 있던데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31세 평균남의 서울 주거 잔혹사 제4장, 나는 왜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질문자 ▪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면 "우리 때는 곰팡이 피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어."라는 대답이 돌아오죠.

전성훈 ▪ 아버지 세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분들도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성장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은 요즘 청년들도 이미 단칸방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활하려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한데, 지금 '주'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전월세살이를 끝내고 내 목돈과 대출금으로 3억 원짜리 집에 들어가서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싶지만, 1~3억 시장이 붕괴한 상태인 거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부러져 있어요. 저는 또래에 비해 일을 빨리 시작해서 돈을 꽤 모았거든요. 그런데도 살 만한 집이 없어요. 이 돈을 들고도, 그렇게 노력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뉴스를 보면 40대 초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ㅉ. 기성세대는 "3년 차면 이제 일 좀 할 때다."라고 했어요. 그때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나도 회사와 함께 커 나갈 수 있었어요. 상승이 가능했죠. 이제는 1인분을 하게 되자마자 퇴직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왜 이 시기에 태어났을까? 1970년대에 태어났다면 좀 더 평범하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질문자 ▪ 상황이 나아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성훈 ▪ 부러진 사다리를 재건해야죠. 현재의 HUG는 보증을 해 주는 곳이지만, 은행 같은 역할을 맡는다면 어떨까 싶어요. 제 보증금을 HUG가 가져가고, HUG는 계약서를 기반으로 집주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 주는 거죠. 2년이 지난 뒤 전세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하면 HUG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HUG가 제게 보증금을 주고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하겠죠.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면 압류를 하고요. 국가가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 내는 거예요.

지금은 HUG가 임대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국민들을 등치고 있어요. 책임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도요. 국가가 부동산 레버리지 투자를 장려하고 보증까지 서 주는 상황이에요. 부동산에 미친 거죠.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100조 원으로 AI와 로봇에 투자하는데, 한국은 100조 원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딥시크를 만드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뭘 만들었나요? '래미안',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명품 만들었구나 싶죠.

저는 정치권이 청년의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청년 위원'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보통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직활동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이 구직 중인 청년들의 괴로움을 알까요? 전월셋집에 살아 보지 않은 사람이 세입자의 고통을 이해할까요?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진짜 청년'을 데려오셔야 해요.

불법 체류자의 자식으로 숨어 산 지 20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꼭 쫓겨나야 할까요?

OPQR_미등록 이주 아동 마리나 _ 대학 재학 중

질문자 ▪ 부모님은 어느 나라 분이신가요?

마리나 ▪ 두 분 다 몽골 분이십니다. 한국에 들어오시고 나서 정식 체류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에 남아서 저를 낳고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된 거죠.

그 문제 때문에 20살 때까지 병원에 못 갔어요. 약국 약으로만 버텨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코로나 유행 초반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당시에 주민등록번호에 따라서 마스크 살 수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저희 가족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마스크를 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사정을 알고 있는 센터에서 마스크를 구해 가지고 보내 주셨어요. 그걸 정말 아껴 가면서 썼어요.

'있지만 없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 아동.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공식 문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의 수는 2만 명.

질문자 ▪ 몽골에는 가 보셨나요?

마리나 ▪ 부모님이 2023년 7월에 강제 추방을 당하셔서 부모님 뵈러 겨울방학에 한 번, 여름방학에 한 번 다녀왔어요.

질문자 ▪ 혹시 몽골어는 할 줄 아세요?

마리나 ▪ 아.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청각, 언어장애를 갖고 계셔서 집에서는 항상 수화로 얘기했어요. 몽골어를 따로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질문자 ▪ 친구분들은 마리나 씨의 상황을 알고 있나요?

마리나 ▪ 고등학교 3학년 때 친한 친구 대여섯 명한테 얘기를 했죠. 다 어이없어 했어요. "왜 네가 한국인이 아니야?" 라면서요.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잖아요. 한국어를 쓰고, 한국 문화 속에서 자라 왔기 때문에 특별히 잘 모르는 부분도 없고요.

"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는데, 제가 왜 한국을 떠나야 하나요?"

질문자 ▪ 부모님께서 한국에 오시게 된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마리나 ▪ 일하러 오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학교에 다니시긴 했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못하셨어요. 장애인이 몽골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사막에서 바늘 찾기 수준인데, 한국에서는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저희 아빠가 춤을 열심히 추셨어요. 몽골 방송에 나오는 대회에 나가셔서 상금을 받고 한국에 갈 자금을 마련하신 거예요.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하시다가 이제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하시게 됐어요. 엄마는 18년 정도 미싱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한 업체에서만 일하신 게 아니어서 어딘가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 하면 바로 가셨죠.

질문자 ▪ 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마리나 ▪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하고 출국하면 법률적인 제한과 벌금을 없애 주겠다'는 제도가 간간이 시행됐어요. 하지만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린 제가 한국에 혼자 남게 되니까, 저희 엄마 아빠는 출국을 쉽게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유령처럼 보낸 어린 시절

마리나 ▪ 보통 20살이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겠다거나 하는,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한 플랜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공부를 한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사실 낮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 '20살이 되면 한국에서 나가야 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너무 무서웠고 많이 우울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쫓겨나게 되면 죽을 계획이었어요. 학교에서 매년 우울증 검사를 하잖아요. 항상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돼서 상담실에서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중학교 2학년 말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법무부에 제 신분을 인정해 달라는 진정을 넣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는 동안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계속 들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진정을 넣기로 했어요. 지난번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20살이 되던 해 4월에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 저는 이제 정식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됐어요.

3년간 완화된 외국인 아동 체류 자격

질문자 ▪ 다른 분들한테도 조건부 체류 자격을 얻을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마리나 씨 덕분에.

마리나 ▪ 네, 그렇죠.

질문자 ▪ 혜택을 받게 된 분들이 많은가요?

마리나 ▪ 미등록 이주 아동 구체 정책의 기준이, 초반에는 너무 엄격했어요. 현재 국내에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 수가 2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구제 정책의 대상이 되었던 친구들은 900명가량이었어요. 굉장히 소수죠.

질문자 ▪ 체류 자격을 완화하는 제도가 3월 말에 시행 종료된다고 하더라고요.

마리나 ▪ 시행을 연장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이 문의했거든요. 하지만 법무부는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어요. 3월에 아예 종료되는 건지, 조금이라도 연장할 생각이 있는 건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죠.

앞으로도 아이들은 계속 태어날 텐데 그 아이들은 제가 진정을 넣기 전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꿨다고 생각했지만, 한 걸음 나아가면 다시 몇 걸음 뒤로 후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체류 자격 완화 정책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고요. 현존하는 다른 정책의 기준도 너무 높아요.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마리나

질문자 ▪ 마리나 씨는 대학 졸업 후에도 한국에 체류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마리나 ▪ 바로 취직을 하면요.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갔었거든요. 평소에 봉사하는 걸 좋아했고,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컸으니까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E-7 비자는 어떤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전과를 했죠. 지금은 마케터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방학 때 자격증을 세 개 따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마케팅조사분석사 2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을 땄어요. 다음에는 데이터분석준전문가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익 공부도 하는 중이에요. 대외 활동도 정말 많이 했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면접을 보러 가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6개월 뒤까지는 취업 준비 기간으로 보고 체류를 허용해 주거든요.

질문자 ▪ 그사이에 취업이 안 되면 바로 쫓겨나는 건가요?

마리나 ▪ 그렇죠.

질문자 ▪ 체류 문제에 대한 장기 계획은 어떻게 세워 두셨나요?

마리나 ▪ 귀화를 하려고 해요. 정식 비자로 5년 이상 체류해야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취직을 하고, 취직 비자로 나머지 햇수를 채우려고 해요.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존재해요. 맞춰 나가야죠.

질문자 ▪ 한국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마리나 ▪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해요. 예전에는 '불법체류자의 자식'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대중은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용어도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지도 모르고요. 이 문제가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하고, 이런 문제를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 나가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미등록 아주 이동을 품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 아닐까요?

이 아동들이 성장했을 때 대한민국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국절 김구 선생 국적 논란까지. 뉴라이트, 역사를 왜 정치에 이용합니까?

OPQR_역사학자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태균 ▪ 음모론은 역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음모론이 왜 생기겠어요.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생기는 거죠. '내가 보니까 그럴 것 같아. 하지만 증거는 없어.' 이런 이야기는 공식적인 역사로 다룰 만한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1강 하나의 대한민국, 두 개의 역사?

박태균 ▪ 2000년대 초반에 '뉴라이트'라는 그룹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 1995년을 전후해서 주요 신문사들이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 전시회' 같은 행사를 열었고 그런 논조의 책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일었고, 그 이후에 뉴라이트가 나온 거죠.

광복절과 건국절 논쟁, 무엇이 정답인가

질문자 ▪ 저희가 분명히 광복절이라고 알고 있는 날을 누군가는 계속 건국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태균 ▪ 근대 이후에 수립된 정부가 통치를 한다는 건 민주주의에 의해 정당성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국가 운영을 맡기는 거잖아요.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일은 국가 방위와 경제 발전이에요. 외부의 침략을 어떻게 이겨내고, 경제적인 번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는지가 관건이죠. 국민의 힘으로 수립된 정부는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 유지 단계에 들어서고 국민들은 '이 나라가 우리의 나라야. 내가 여기를 지켜야 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런 국민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까지가 '네이션 빌딩(nation-building)'에 속합니다. 네이션 빌딩은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가리키는 학계 용어예요. '건국절'이라는 용어는 학계에서 쓰지 않아요. 국가는 어느 날 하루 만에 건국되지 않습니다. 건국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이지, 어느 시점에 건국이 완료됐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가 건국절인지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까지 우리는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뉴라이트는 시장을 중심에 놓고 역사를 바라보자는 입장을 취해요. 시장과 자본주의경제를 중심으로 역사를 본다면 새로운 역사 서술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 지점은 논쟁이 가능하다고 봐요.

문제는 정치화예요.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역사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역사는 해석의 문제고 관점의 문제라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팩트 자체를 왜곡해서는 안 되겠죠.

제2강 뉴라이트 역사관의 뿌리

박태균 ▪ 올해가 한일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은 역사를 보는 인식이 각각 다르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협정을 맺고 논의를 할 때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식이죠. 1965년의 한일협정 내용을 보면 한일 합방이라든가 을사늑약이 언제부터 무효인지를 얘기해요. 일본은 1945년에 패망한 이후부터 무효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일 합방 조약 자체가 무효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면 '양국이 역사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향후 공통의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쓰면 돼요. 솔직하게. 하지만 그렇게 쓰지 않았죠. 일본이 제안을 해서 '이미 무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already null and void"라고요. 'already'라는 한마디로 미봉책을 쓰듯이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일본은 '한국은 한국의 입장으로 해석해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석한다.'라고 말해 버렸어요.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것이 합법적인 행위라고 본다는 걸 표현한 셈이에요. 식민지 근대화론과 통하는 논리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을 발전시켜 줬으니 한국 국민들도 식민 통치를 원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게 돼요.

조선은 일본 없이 스스로 발전하지 못했을까?

질문자 ▪ 일제강점기 시절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 당시의 조선은 일본이 없었으면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박태균 ▪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떤 나라든 속도와 방향의 차이만 있을 뿐 시간이 지나면 발전해 나갑니다. 세계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되지 않았어도 계속 발전했을 겁니다. 식민 통치를 받지 않았다면 발전 속도가 더뎌졌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사회적 부작용이 줄어들었을지도 모르죠.

제3강 정치의 희생양이 된 역사

박태균 ▪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통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자료를 발굴하고 서로 파악한 사실을 공유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양쪽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서로 달라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접근할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거든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내용이 다르겠죠. 일본에는 군대가 이동할 때 왜 위안소가 그 군대를 쫓듯이 따라갔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기하기 좀 꺼려지는 부분도 건드려 줘야 하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해야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태도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양옆에는 중국과 미국이 있잖아요. 한일 양국이 경제, 사회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공조해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인정하기는커녕 상대방의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비난만 하는 사이에 관계가 계속 삐거덕거리고 있어요. 서로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 상대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 ▪ 일본에는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던 시절을 비판적으로 보는 역사학자분들이 계신가요?

박태균 ▪ 계시죠. 실제로 많이 계세요. 전대 일왕은 우리나라에 사과도 했잖아요.

“일본에 의해 초래된 이 불행했던 시기에 귀국의 국민들이 겪으셨던 고통을 생각하면 본인은 통석의 염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박태균 ▪ 일왕으로서는 본인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왕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일본 정부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왕이 우리나라를 가장 깊이 이해한 일왕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런 왕이 있을 때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시기인데,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일왕을 비난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싶다면 독립운동가분들이 돌아가신 곳을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일왕의 책임에 대한 비판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이루어졌을 때가 한일 관계의 분기점이었어요. 사람들이 ‘대통령은 도대체 왜 독도에 갔지? 아무런 이슈도 없는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일 관계를 쓸데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그래 놓고 책임을 문재인 정부한테 물었어요. 저는 이것도 일종의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해요.

제4강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박태균 ▪ 작년에는 8.15 기념식이 각각 다른 곳에서 두 번 열렸죠. 정부와 광복회가 따로 행사를 진행했어요. 광복절이라는 민족적 기념일에는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데, 기념식이 나뉘어서 진행된다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요즘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3.1운동은 그런 분열 없이 국민들이 독립운동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다 통합돼서 벌인 운동이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3.1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로 보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있는가?

양로원이라고 해 놓고 노령견 파양 펫숍이라고요? 우리는 반려동물과 함께 나이 들 준비가 되어 있나요?

OPQR_수의사 박정윤
노령 동물 전문 병원 근무

박정윤 ▪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네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은 동물과 함께 살아요. 옆집, 앞집, 윗집 중 하나에는 개나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통계에 나와 있는 수치가 그 정도라면 실제 반려동물의 수는 더 많을 수도 있죠. 식당, 카페, 숙박업소들이 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마케팅 요소로 삼아서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동물과 관련한 축제가 있어요. 없는 행사가 없어요.

빠르게 나이 드는 동물들

박정윤 ▪ 그런 산업이 굉장히 영리하게 돌아가는 것에 비하면, 나이 든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는 아쉬운 점이 많죠. 반려동물의 라이프사이클은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돼요. 금세 육아에서 간병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간병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나이 든 동물들을 케어하는 물품과 관련한 산업은 속속 생겨나고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동물의 노화를 대해야 하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질문자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은 동물들이 나이 들거나 병들면 보통 어떤 상황에 처하시나요?

박정윤 ▪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사람처럼 평생 관리를 받아야 하는 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질문자 ▪ 사람이랑 똑같네요.

박정윤 ▪ 네, 맞아요. 집에 나이 든 환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시간 문제도 생겨요. 동물이 갑자기 아파하면 직장에 휴가를 내야 하는데, 직장에서 “지난주에도 냈는데 또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으면 “저희 집 개가 아파서요.”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많이 보이죠.

제가 일하는 병원에 초진을 보러 오는 동물들은 대부분 12~13살인데, 사람으로 치면 60~70대예요. 사람이라면 ‘어디가 쑤신다, 속이 울렁거린다’는 말로 낮은 단계의 증상을 표현해서 주변에서도 상황을 바로 인식할 수 있을 텐데, 동물들은 먹은 걸 토하거나 갑자기 주저앉기 전까지는 몸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어렵지만 해야만 하는, 이별할 준비

박정윤 ▪ 나이 든 동물과 어떻게 이별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생각을 좀 해 둬야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별을 준비하라는 말을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왜 그걸 미리 생각해야 하냐면서, 무슨 저주라도 들은 것처럼 언짢게 여기세요.

동물의 죽음이 막상 닥쳐오면 현실을 부인하게 되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요. 귀한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별을 준비하기는 힘들어요. 나이 드는 동안 천천히 준비해야 하고, 그러려면 교육이 필요해요.

질문자 ▪ 같이 살았던 반려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정윤 ▪ 달래는 저랑 11년 같이 산 강아지예요. 달래한테는 제가 여섯 번째 가족이었어요. 저랑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가 6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15~16살 정도에 떠난 거죠. 이비는 저의 첫 번째 고양이예요. 저랑 20년을 같이 살았고요. 쏘롱이라는 고양이가 저랑 17년 동안 같이 살다가 떠났어요.

42일 사이에 셋 다 갔어요. 쏘롱이랑 달래가 3일 간격으로 떠났죠. 장례식장에 두 번 연달아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셋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던 이비도 떠날 때가 가까워져서, 또 장례 치를 준비를 해야겠구나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멘탈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밥도 잘 먹고 잘 지내 주는 거예요. 그렇게 40일 정도 있다가 자는 듯이 떠났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비가 ‘네 잘못이 아니야. 다 떠나게 되어 있는 거야.’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비가 가기 전까지는 진짜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이비가 떠나는 과정에서 우리를 위로해 준 덕분에 ‘이제는 떠난 아이들을 추억하면서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질문자 ▪ 선생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함께한 가족들이 한꺼번에 떠난 거잖아요. 그때의 심정에 대해서 여쭤봐야 할 것 같네요.

박정윤 ▪ 그걸 말하다 보면 울어요.(웃음) 몇 년이 지나도 울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떠나보내면 ‘내가 혹시 뭔가 잘못했을까?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일찍 떠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양이가 20년을 살았다면 남들은 천수를 누렸다고 하겠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아니, 다른 집에는 28살 고양이도 있다던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 그래요.

수의사인 저조차도 그러니까요. 머리로는 다 알죠. 몇 년 동안 이별을 준비했고, 곧 떠날 거라는 걸 알았는데도 막상 가 버리면 제가 한 잘못들이 무엇이었을지 떠올리게 돼요. 그런 생각은 줄이고 좋은 기억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평생을 함께해 온 가족이자 동반자, 그런 그들의 마지막을 지키고자 떠나지 않는 사람들

박정윤 ▪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요양원은 둘째치고 실버타운에 들어갈 때도 동물을 데려갈 수 없어요. 입소하려면 동물들을 파양해야 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최근 들어 이런 분들을 노리는 신종 펫숍이 생겼어요. 다양한 이유로 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적당한 기부금을 주고 동물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에요. 동물 보호 단체가 아닌데, 좋은 곳으로 보내 주겠다고 해요. 그런 업체들은 다 펫숍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산업이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이 사는 이 개가 죽을 때까지는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 고양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면 같이 살던 동물한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없어요. 외국에서는 가능한데, 우리나라 병원에는 동물을 데려가지 못하니까요. 동물이랑 영상 통화를 할 수도 없잖아요. 나이 든 동물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동물도 가족인데,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같이 살던 동물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가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반려동물과 함께 나이 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박정윤 ▪ 사람들이 동물을 키울 때 죄책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산책을 몇 번 못 시켰다든가 8시간 이상 혼자 두면 개들에게 좋지 않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누군들 잘해 주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노동조건이 이러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죄책감이 커져서 이 동물이 나와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동물을 자꾸 다른 집에 보내려고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은 같이 사는 가족을 잊지 못해요. 그들의 세상에서는 같이 사는 사람이 전부예요. 최고의 진료를 받게 해 주지 못하고 제때 검사를 시켜 주지 못해도,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함께 지내는 소중한 하루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왜 헌법을 공부해야 합니까? 개헌, 진짜 필요합니까?

OPQR_법률가 차병직
변호사, 「지금 다시, 헌법」 저자

박태웅 ▪ 헌법과 관련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 지극히 드문 일인데, 그 일을 해내신 변호사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차병직: 예, 감사합니다.

박태웅 ▪ 지금은 헌법적 질서가 깨져 있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시기잖아요.

차병직: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은 헌법적 질서가 깨진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요.

저도 법률가이긴 하지만 헌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헌법에 대한 책을 쓰게 됐는데, 국가적 비상 상황이 오니 시민분들이 헌법에 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책을 보시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사람들을 좀 현혹시키기도 했고요. 사실 헌법을 읽어 봐도 뾰족한 해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박태웅 ▪ 아니, 헌법 관련한 책을 두 번이나 쓰신 분께서.(웃음)

헌법 아래 국민적 통합이 과연 가능한가?

차병직: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헌법은 누구의 것인가?' 박 의장님의 평소 생각을 여쭤보고 싶네요.

박태웅 ▪ 헌법에는 '나와 적이 같이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려면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하고도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룰이 필요하잖아요.

차병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헌법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른, 심지어 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것이기도 하지요.

헌법 조문 하나를 두고도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어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죠.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헌법을 제대로 보면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국회와 의논해야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 하나만 보고 권한을 행사했다면, 그건 헌법적 오류의 대표적 예가 되는 것이죠.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라면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헌법적 통합을 이루려면 결국 정치적 협상과 타협이 필수예요. 그게 정치의 꽃이고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 기능이 거의 실종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개헌은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차병직: 정치적 고비마다 개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헌을 아예 안 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웅 ▪ 시대가 계속 변한단 말이죠. 사회환경이 아예 바뀌어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긴다면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차병직: 개헌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의 폐해는 결국 권한을 잘못 행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헌법 조항 자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박태웅 ▪ 완전히 동의합니다.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게 제도의 문제인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헌법은 억울하죠.

차병직: 우리나라의 헌법은 1987년 이후 개헌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평균 4년마다 개헌을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유지된 이 헌법이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지 않습니까? 헌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적 위기가 초래될 수는 있지만, 헌법 때문에 국가적 위기가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안전판이 있는가?

차병직: '우리 사회에는 안전판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범죄자는 재판 절차를 거쳐서 형벌을 받죠. 그 후엔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 사람을 다시 우리의 이웃으로, 동료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게 범죄인의 재사회화, 그러니까 형벌 제도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범죄인이면 영원한 범죄인이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명인이 비행을 저지르면 법적,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죠. 한차례의 비난이 끝난 뒤에도 계속 재론이 돼서 재사회화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박태웅 ▪ 정말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누군가가 한번 공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면 사회 전체가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몰매를 가하죠. 그 이후로는 마치 사회 전체가 파파라치가 된 것처럼 계속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비난해요.

이런 현상에 언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나치게 많은 매체가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기사를 대책 없이 배설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를 대단히 모질게 만들고, 지옥 같은 풍경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가, 어떤 합의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법부를 불신하면서 사람들은 왜 '법대로 하자'고 할까?

차병직: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사법부를 대체로 신뢰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웅 ▪ 불신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차병직: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법부를 불신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문제를 법원에 가져갈까요?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면 애초에 법원으로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개인적인 내밀한 문제든 고도로 정치적인 문제든 다 법원으로 가져갑니다.

박태웅 ▪ 끊임없이 고소하고, 정치 이슈를 사법적인 문제로 바꿔 버리죠.

차병직: 제가 법률가 생활을 약 4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만, 그때는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느 정도 승복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사법부가 공정성이든 정의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결론을 내려 준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유사한 사안이라도 언제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형량뿐 아니라 유무죄가 바뀌는 극단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변호사를 쓰는지가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기면 당연한 것이고, 지면 불복해야 하는 거예요.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죠. 재판에 이기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박태웅 ▪ '내가 돈을 써서 이겼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겠죠.

차병직: 애당초 근본적인 재판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니까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본인입니다. 당사자끼리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우리는 직접 협상하지 않고 법원을 불신하면서도 법원에 가서 제3자에게 판단을 맡깁니다.

박태웅 ▪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온갖 문제가 사법회되는 이유는 토론하고 합의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사법의 자의성이 발휘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사법부가 대단히 공정하다면 사람들이 법원으로 가져가지 않았을 문제도, 돈을 많이 써서 압도적인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사법과 정치는 정말 분리될 수 있을까

차병직: 법률 문제, 그러니까 사법 작용이 정치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죠.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탄핵 재판만 하더라도 외부 여론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재판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오히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재판에는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항상 있는 겁니다.

질문자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진심으로 윤 대통령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척하고 있는 걸까요?

차병직: 일단 법률가들의 고질적인 직업병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가들은 자기가 상당히 똑똑한 줄 알거든요. 정말입니다. 굉장한 착각이죠. 찰스 디킨스가 법률가들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소설에 많이 썼어요. 법률가들은 대의명분이란 게 없는 인간처럼 보이거든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돈만 주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그 수단이라는 것이 법적 논리입니다.

법은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법률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법률가로서는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 일단 다 끌어와 보는 겁니다. 그중에서 하나 얻어걸리면 자기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낮에 뉴스를 들었는데, 미국의 어느 갱단 두목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죠. "굳이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갱단에 들어오지 말고 로스쿨로 가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두 명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켜본 국민들의 슬픔

질문자 ▪ 최근 10년 사이에 대통령 두 명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병직: 탄핵 소추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첫 번째 불행이죠.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헌법 절차가 잘 작동한 것이긴 하지만 서글픈 일입니다. 탄핵이 이루어지면 임기 도중에 정권 교체를 하게 되는데, 탄핵이 아니었다면 쿠데타나 혁명이 일어날 때나 벌어졌을 일이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70%가 넘더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이상 그 사람들의 분노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사회적인 후유증이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모두가 서글퍼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자 ▪ 헌법의 수호자로서, 또는 한 명의 주권자로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차병직: 헌법은 국가 권력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고, 국민은 수범자가 아니라 수호자입니다. 주권자라고 해서 모 대통령처럼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사실 좀 손해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때로는 자기 권리를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점점 확산되면 정치적 문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쉽지는 않겠죠.

에너지 문제에 좌파, 우파가 왜 필요합니까? 재생에너지는 환경문제를 넘어선 글로벌 제조업 패권전쟁의 주인공입니다

OPQR_애널리스트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그린 산업 분석 애널리스트

박태웅 ▪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현황은 어떤가요?

한병화 ▪ 신규 시장 기준으로 보자면, 전 세계에서 새로 지어지는 발전소의 80~90%가 재생에너지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전력량을 기준으로 보면 30%가 조금 넘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박태웅 ▪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액 규모가 급격히 커진 이유가 뭘까요?

한병화 ▪ 표면적으로는 탄소 감축이지만, 이 문제를 환경 면에서만 접근하면 현상을 제대로 못 보게 돼요. 실질적으로는 헤게모니 다툼이에요.

재생에너지, 더 이상 환경문제가 아니다

한병화 ▪ 현재 세계의 성장 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이슈예요.

AI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이 기업들은 RE100을 따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합니다. 전 세계의 산업이 저탄소 산업구조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어요.

박태웅 ▪ RE100 캠페인에서는, 전체 제품을 만드는 회사뿐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까지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거죠?

한병화 ▪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제안이었는데 내용이 점점 확장됐죠. 웬만한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공급사까지 전부 RE100을 따르고 있습니다.

박태웅 ▪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써서 부품을 만들지 못한다면 공급처를 뺏긴다는 거죠.

한병화 ▪ 그렇죠. 전 세계의 산업이 저탄소 구조로 바뀐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예가 전기차 부문이에요.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이나 충전하는 과정에서 석탄, 천연가스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전기차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철강산업도 살펴볼 만한데, 이 산업이 당면한 과제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그린 철강'을 만드는 것입니다. 철광석을 녹일 때 환원제로 석탄을 넣다 보니까 다량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최근 들어 환원제를 수소로 바꾸는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이 기술에 투자하고 있고, EU도 대규모 자금을 빌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2030년 이전에는 뚜렷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도 못 한 단계이고요.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태웅 ▪ 유럽에서는 2030년에 성과가 나올 텐데요?

한병화 ▪ 그러니까요. 앞으로 철강에 대한 심각한 수요 절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 철강이 들어가잖아요. EU에서 어느 순간 그린 철강을 쓴 전기차만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하겠죠. 과거에는 유럽 국가들이 철강 강국이었거든요. 지금은 동아시아한테 헤게모니를 뺏긴 상황인데, 그린 철강을 통해서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재생에너지의 문제는 헤게모니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에너지를 명분으로 한 글로벌 제조업 헤게모니 쟁탈전

한병화 ▪ 우리나라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한 거죠.

박태웅 ▪ 철강, 시멘트 등의 특정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으니까, 전환하지 못했다면 페널티를 감당해라.'

한병화 ▪ 6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데, 품목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에요. 유럽 전역에서는 탄소세를 부과합니다. 각 기업들이 탄소를 1톤 배출할 때마다 100달러가 좀 넘는 금액을 내야 해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면서 무상 할당이라는 제도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공짜로 막 나눠 줍니다.

박태웅 ▪ 저탄소 구조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계속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 오히려 경쟁력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겠네요.

한병화 ▪ 그렇죠. 탄소 배출 가격이 싸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탄소세가 없는 나라의 제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EU가 탄소국경조정세를 통해 그 차이만큼의 비용을 요구하려는 것이에요. 이 제도가 2026년부터 도입되고요. 트럼프 정부도 유사한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박태웅 ▪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1~2년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한병화 ▪ 그렇습니다. 업체들은 이미 2024년부터 EU에 탄소국경조정세를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했어요.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는 우선 에너지 전환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모든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전체 전력 대비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미국이 2024년 연말 기준으로 25% 정도가 됐고요. 유럽은 45% 정도니까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는 10%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재생에너지 시장의 정치화로 놓쳐 버린 골든 타임

박태웅 ▪ 큰일 났네요. 2024년에 제가 읽은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석탄 발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더 높은 나라는 둘뿐이다. 한국과 일본이다.' 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유독 비싼가요?

한병화 ▪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대규모의 발전 설비를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낮춰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 전환이 한참 활발했을 때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1년에 5기가와트 수준으로 설치했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는 2기가와트 수준으로 줄었어요. 풍력발전 설비는 아예 설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않는데 단가가 어떻게 내려가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전환 문제가 정치화되어 있잖아요. 지난 8년 동안 계속 재생에너지인가, 원자력인가를 놓고 논쟁만 했어요. 그러다 골든 타임을 상당 부분 놓쳐 버린 거예요. 사실 글로벌 트렌드는 탈원전, 또는 감원전이에요.

원전 개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원전 1기를 짓는 데 너무 긴 시간이 걸려요. 평균 15년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탄소 감축 시대가 왔으니 에너지원을 빠르게 바꿔야 하잖아요. 한 대 짓는 데 15년 걸리는 시설로 어떻게 빠른 전환이 가능하겠어요. 비용 문제도 있죠. 유럽과 미국에서 원전 1기를 지으면 2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다음 정부의 임기는 2030년까지잖아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정부는 이 과제의 심각한 문제는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이 문제는 정치와 무관한 영역으로 삼아서 사회 전체의 동력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조금 과장해서, 아니 과장이 아니죠. '폭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쇠퇴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지역에는 탄소와 관련한 시설이 많잖아요. 이미 지방 소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계적인 흐름 때문에 지방 소멸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학, 정유, 철강산업은 탄소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중동과의 경쟁 상황에도 놓여 있어요. 지금은 가동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우리에게 기회는 있는가?

박태웅 ▪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고, 각각의 산업 분야를 들여다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낮은 건가요? 추진력이 제대로 붙기만 한다면 이 분야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병화 ▪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을 향한 경주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제조 인프라입니다. 풍력발전기든, 태양광 모듈이든, 전기차 배터리든 제조 인프라를 통해 만들어지니까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죠. 그 미국의 파트너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제조업 없이는 미국도 유럽도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아무리 둘러봐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제조업 분야 인프라를 풀 라인업으로 갖춘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술을 가진 한국과 함께해야 에너지 전환이 가능해요.

박태웅 ▪ 우리나라가 몇 년간 허송세월해서 엄청난 위기 국면에 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롭게 열리고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공장을 잘 갖추었다는 점에서 기회를 맞이한 상황이라는 거죠. 위기와 기회가 정확하게 딱 붙어 있네요.

한병화 ▪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많지 않아요. 그나마 우리나라에는 기술이 있고, 기업이 있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돌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5년간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해 나간다면요. 우리가 또 뭔가를 작정하고 진행하기 시작하면 빨리 해내잖아요. 잠재력은 이미 갖추고 있고,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태죠. 기업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 왔다고 생각해요. 그에 비해 정부의 대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낙제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태웅 ▪ 에너지를 정치적 이념과 분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제조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제대로 살린다면 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가리키는 바늘을 기회 쪽으로 돌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한병화 ▪ 충분히 있죠. 우리나라에 농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넓은 농지를 왜 태양광발전과 연결하지 않습니까? 대충 계산해 봐도 10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요. 농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농장주와 목축업자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 재생에너지예요. 재생에너지 업체에 땅을 빌려주는 겁니다.

박태웅 ▪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농작물 수출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던데요.

한병화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상풍력발전에도 유리해요. 나라의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조건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강국이에요. 이미 기반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놓쳐 왔어요. 기회가 위기로 되어 버리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내 일자리와 직결된다

질문자 ▪ 미국이 파리 협정 재탈퇴를 선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려요.

한병화 ▪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트럼프 1기 정부도 파리 협정에서 탈퇴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미국의 풍력, 태양광발전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였어요. 아주 아이러니컬하죠. 기업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전략은 전력을 싸게 구매하는 거예요.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을 통해 만들어지는 전력이 가장 싸거든요. 트럼프가 아무리 뭐라 해도 기업은 그 말을 듣지 않죠.

질문자 ▪ ‘재생에너지, 탄소 감축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한병화 ▪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받고 있는 큰 불이익 중 하나가 삼성 반도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에너지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RE100 대응에서부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TSMC는 대만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생산하는 전력을 구매하겠다는 계약을 맺으면서 RE100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해외에서는 RE100 목표를 거의 달성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죠.

삼성전자의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고객들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비단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 글로벌 트렌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각자 잘 판단해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 직장은 평생 다닐 만한 곳은 아닌 거예요. 다만 옮길 만한 기업이 아직 많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일회용품을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오락가락,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어쩌라고요?

OPQR_을지로 카페 사장 주철홍
‘더 데일리 카페 인 을지로’ 운영

주철홍 ▪ 이 일은 2009년에 서울 이문동의 한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처음 시작했어요. 지금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에스프레소를 메인으로 ‘카페 콘파냐’, ‘카페 봉봉’ 같은 메뉴를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맛있는 커피의 첫 번째 조건은 가격이에요. 아무리 맛있어도 밥 먹는 데 지장 줄 정도 가격이면 부담이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 정도 품질의 커피를 가장 저렴하게 팔고 있는 건 확실해요.

환경을 고민하다 에스프레소 바를 열다

질문자 ▪ 에스프레소 바라는 매장의 형태가 꽤 독특한데요. 이런 카페를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주철홍 ▪ 환경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까 되도록 일회용품을 쓰지 말아야겠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 봤는데, 에스프레소는 보통 매장에서 바로 드시고 가시잖아요. 에스프레소를 주메뉴로 두면 일회용품 사용을 굉장히 크게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메인으로 한 커피 전문점을 열게 됐습니다.

질문자 ▪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주철홍 ▪ 우연히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내가 누리는 풍요의 대가로 환경이 훼손된다는 걸 알게 됐죠.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나는 뭘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락가락하는 환경정책 속에서 강요되는 희생

주철홍 ▪ 제가 카페를 2022년 1월 21일에 오픈했는데, 그해에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어요. 정부에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한 손님이 카페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1000원을 돌려주는 사업을 시행했죠. 음료를 산 카페가 아니더라도, 그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카페에 컵을 돌려주면 1000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도 그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해 말에 일회용품 금지 제도가 1년 유예됐는데, 저는 다회용 컵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니까 문제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다회용 컵 사업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업이 종료되는 날 오후 3시에 이메일로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서울시의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계속 계약하고 싶다면 더 많은 유지 비용을 내야 한다는데, 그 비용이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을 내는 것보다 일회용품을 쓰는 편이 더 싸거든요.

환경에 좋은 일을 하려고 사업에 참여했는데, 희생이 강요되기 시작한 거죠. ‘선한 일을 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계약을 조금 더 유지했거든요. 그해 11월에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가능해졌어요. 일회용품 금지 제도가 무기한 유예됐죠.

일회용품 금지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정식 시행 전부터 동참한 건데, 제도 시행이 일관적이지 않으니 저 같은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난 뭐 한 거지?’ 싶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정책에 참여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저희 카페에 일회용 컵이 없다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못 하게 한다고 손님들이 항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가 뭔데 못 쓰게 해?”라면서요. “나는 이 카페 정책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결사반대해요. 이 카페에 다시는 안 올 거야.” 이러고 가신다니까요? 하루는 다른 카페 사장님인지 들어오셔서는 “여기 일회용 컵 안 써? 그럼 손님 없을 텐데, 그냥 써.”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환경을 생각하는 카페라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 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편리함을 이기긴 어렵더라고요.

작은 실천이 이끌어 내는 확실한 변화

질문자 ▪ 아이러니하네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정책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거시적이지도 않았고, 단편적으로 이뤄진 거잖아요. 지금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나요?

주철홍 ▪ 규제가 존재해요. 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종이컵은 사용 가능하고요. 사실 이게 되게 웃기는 상황이에요. 종이컵이 종이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안쪽에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플라스틱 컵이랑 종이컵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는 거죠.

환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복합 소재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알게 되거든요. 복합 소재로 만든 제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환경을 위해 텀블러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텀블러는 복합 소재 제품이니까 이 제품이 널리 쓰인다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게 될 수도 있어요. 카페에서 쓰는 플라스틱 컵보다 텀블러를 만들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텀블러를 사는 대신 카페에서 주는 플라스틱 컵 하나를 계속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 컵을 비워서 물을 담아 마시고, 다른 카페에 가져가서 여기에 음료를 담아 달라고 하는 거죠.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쓰고 저녁에 버리면 되죠.

이 원두 봉투를 한번 보세요. 겉면은 종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은박이 있어요. 마지막 층에는 플라스틱 비닐이 있어요. 3중으로 되어 있어요. 재활용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카페에서는 빈 원두 봉투를 가져오시면 그 안에 원두를 담아 드리면서 20g을 더 넣어요. 손님도 좋고, 저도 좋고, 환경에도 좋죠.

전국의 카페들이 함께 ‘한 번만 더 써요’ 캠페인을 해 보면 좋겠어요. 환경에 눈곱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편리함을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살짝, 조금씩만 희생하면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일의 참 좋은 부분이, 가게가 좁다 보니 손님들 이야기가 다 들리거든요. 커피가 맛있다고 말씀해 주실 때 가장 기쁘고요. 제가 환경을 생각하면서 하는 노력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두를 담을 병을 가져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싶고 마음이 뿌듯해져요.

저는, 제가 하는 장사가 정말 잘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해도 잘되네?’라는 모델을 보여 드려야 다른 분들도 동참하시죠. 스타벅스가 잘되니까 다른 카페들이 따라 했던 것처럼요.

‘따라 하고 싶은 가게’를 만드는 게 제 바람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언제부터 필수 재테크 수단이 되었나요? ‘오징어 게임’에 빠져 버린 우리나라 부동산, 이 게임을 끝낼 수는 없나요?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남기업

박태웅 ▪ 소장님이 하시는 일을 짧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연구소 이름도 인상적인데요.

남기업 ▪ 저희 연구소 이름이 ‘토지+자유연구소’인데, 사람들이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연구소냐?”라고 놀리기도 해요.(웃음) 본뜻은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굉장히 혁신적인 의미입니다.

박태웅 ▪ 오늘 나눌 이야기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것이겠네요.

남기업 ▪ 그렇죠. 토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재화잖아요. 새로 만들 수도 없죠. 토지 위에 건물을 올리면 그게 부동산이 되는 건데,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지만 토지의 가치는 위치가 좋다면 올라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게 되고,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이 오르죠. 결국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벌어져서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박태웅 ▪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떤 질문에 답해야 할까요?

남기업 ▪ ‘부동산으로 버는 돈은 불로소득인가?’라는 질문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버는 돈은 불로소득인가?’

남기업 ▪ 집을 알아보고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 것도 물론 노력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큰 노력인데, 그런 노력이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지는 않아요. 사회 전체의 부, GDP를 증가시키는 노력이 아닌 거예요.

박태웅 ▪ 일산과 분당이 비슷한 시기에 개발됐는데 지금은 땅값이 서로 큰 차이가 나요. 부동산으로 버는 돈이 불로소득이 아니라면, 일산에 사는 분들이 분당에 사는 분들에 비해 덜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땅값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서울과의 접근성, 교통망 문제 같은 부분에서 찾아야 하잖아요.

남기업 ▪ 분당은 위치가 좋은 곳이에요. 강남 중심의 개발 정책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강남 바로 아래에 있는 분당의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분당에 사는 개인이 노력해서 소득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박태웅 ▪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전셋값이 오르면 세입자가 훨씬 더 큰 비용을 내야겠죠.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아야 할 거예요. 다른 지역 사람들의 부가 분당 사람들의 부로 전이되는 꼴이죠.

남기업 ▪ 그렇죠. 소득의 역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이 노력해서 얻은 소득이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계속 이전되는 거죠. 노력의 대가로 소득을 얻는 건 괜찮아요. ‘기술개발을 열심히 하더니 돈을 많이 벌었네.’, ‘경영을 혁신하더니 성공하는구나.’ 이런 경우에는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격차가 벌어지면 화가 나죠. 성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여 버려요.

집은 계속 짓는데, 왜 내 집은 없을까?

남기업 ▪ ‘소득 대비 집값’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득에 비해 집값이 몇 배인지를 보는 건데, 수도권은 17배예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7년 동안 모아야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에 해마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이 약 50만 호쯤 인데 그중 절반 이상을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사요.

1995년의 자가 보유율이 53.2%였거든요. 2004년의 자가 보유율은 56.4%예요. 집이 끊임없이 공급되는데 내 집은 없는 거예요. ‘지니계수’라는 지표가 있죠.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나타내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거고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평등한 거죠. 우리나라 토지의 지니계수는 0.916이에요.

박태웅 ▪ 그 정도로 불평등이 심합니까? 전체의 10%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90%가 부를 계속 넘겨주고 있다는 뜻이네요.

남기업 ▪ 해방 직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작농이었고 지주는 소수였잖아요. 1945년 당시의 지니계수가 0.73이에요.

박태웅 ▪ 세상에,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쁘네요. 조선 말, 양반들이 땅을 다 가지고 있던 그 시절보다도 안 좋다니. 그렇다면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 이유가 없죠.

부동산 투기는 어쩌다 필수 재테크 수단이 되었나?

남기업 ▪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는 1960년대 후반 강남 개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신문에 ‘복부인’들이 빨간 바지 입고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 모습이 카툰에 실리고 그랬어요. 1990년대까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건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죠.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일가족이 자살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박태웅 ▪ 그땐 ‘투기’라는 표현을 썼죠.

남기업 ▪ 그랬죠.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나라의 금융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개인에게 대출을 잘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기업에 과도하게 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일어났다는 반성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금융계가 새로운 기회를 노린 건지, 개인 대출이 크게 늘어났어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죠. 그 무렵에 등장한 용어가 ‘재테크 투자’입니다.

박태웅 ▪ 그때부터 부동산 투기가 ‘투자’라고 불리기 시작했죠.

남기업 ▪ ‘투자와 투기를 뭐 하러 구분해? 재테크 수단이지.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거잖아.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라 그저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만한 경제행위를 한 건데 왜 비난해? 너도 은행에 가서 대출받고 부동산을 사.’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다주택자들이 대부분 전세를 끼고 집을 샀죠. 전세대출이 등장하고 나서 ‘갭 투기’라는 말이 생겼어요. 전세대출이 증가하니까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의 갭이 줄어들거든요. 그걸 이용한 투기 방식이죠.

박태웅 ▪ 집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에 10%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10%의 돈만 가지고 계속 집을 사서 전세를 놓을 수 있죠. 실제 자산이 별로 없는 누군가가 1000채의 집을 보유할 수도 있는데, 한 번 펑크가 나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남기업 ▪ 전세 임대인,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의 욕망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욕망이 충족될수록 대한민국의 상황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득은 누군가의 피해를 기반으로 얻는 소득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서 개인을 탓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개인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의 노력이 사회 전체에 유익한 결과로 돌아오도록 정부가 제도를 짜야죠. 개인은 사회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해요.

대한민국 엘리트들, 부동산 볼모로 잡혀 있다?

남기업 ▪ 부동산 문제는 왜 계속 방치됐을까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많이 갔어요. 언론사들도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죠.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의 시가가 2조 원이 넘어요. 건설사가 언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야 분양시장이 활성화되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책을 부추기는 거죠. 금융권 입장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올라야 담보대출의 이자를 회수하기에 유리해요. 설령 대출을 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못 갚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받아 낼 수 있잖아요.

박태웅 ▪ 정책 당국이 부동산의 볼모로 잡혀 있는 꼴이네요. 정부에서는 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강력한 경기 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개발을 택했잖아요. 역대 정부가 모두 그랬어요.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큰 책임이 있죠.

전세자금 대출은 세입자를 위한 것인가?

박태웅 ▪ 요즘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로 결혼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정책일까?’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기업 ▪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되어 있죠. ‘소득도 안 보고 저리로 빌려줄게.’라고 하는데, 실상은 다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에요. 다주택자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세입자, 청년들한테 받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1~2억을 대출해 줬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출금액이 5억까지 올라갔죠. 전세가도 따라서 올라갔어요. 이때 다주택자들이 많아지면서 갭 투기라는 용어가 생긴 거예요.

‘부동산 판 오징어 게임, 계속하시겠습니까?’

박태웅 ▪ “엄마 아빠도 다 부동산으로 돈 벌었잖아.”라는 말에 기성세대는 뭐라고 말해 줘야 할까요?

남기업 ▪ 반성해야죠. 기성세대 모두가 돈을 번 건 아니지만, 그중 일부는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축적했어요. 그게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반성이 필요해요. 그들을 본보기 삼아 지금의 청년들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나빠질 겁니다.

박태웅 ▪ 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에서 ‘오징어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죽을 사람의 수가 정해진 게임인 거죠. 이 게임은 그만둘 수 있어요. 다 같이 그만두자고 합의한다면요.

남기업 ▪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자산 거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온 나라가 주목하게 될 거예요. 나라 전체가 활기를 되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정상 가족 타령만 할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위안이 되어 주는 관계, 이게 가족이 아니면 뭔가요?

OPQR_10년째 친구들과 동거 중인 김주온
경기도에서 친구들, 여동생, 강아지와 동거 중

김주온 ▪ 서울 출신이 아닌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게 되면서 자취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룸에 살다 보니까 거실이 있는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이랑 보증금을 합치기로 하고 집을 보러 다녔어요. 방 2개짜리 집을 찾다 보니까 방이 3개인데 괜찮은 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한 명 더 모아서 3명이 같이 살게 됐죠. 이후에 제 동생이 서울에 자리를 잡으면서 저랑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월세도 절약되고, 요리해서 같이 먹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같이 살림을 꾸리기 시작한 게 2014년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됐네요.

질문자 ▪ 가족 구성원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건 강아지 '도레'인가요?

김주온 ▪ 네. 애니멀 호더가 방치한 새끼 강아지들을 제 친구가 구조했고, 임보하면서 입양처를 찾고 있었어요. 그사이에 저희가 도레를 보게 됐는데 처음으로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강아지가 운명처럼 우리에게 도래한 희망이라는 뜻에서 '도래'라는 이름을 지으려다가, 좀 더 발랄하게 '도레미'의 '도레'로 바꿨어요.

모두의 생활을 지탱해 주는 가족회의

질문자 ▪ 함께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김주온 ▪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많았어요. 저희는 공동생활을 마냥 이상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타인이 함께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이 생활을 잘 유지하려면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가족회의가 저희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에요. 공동 생활비를 어떻게 지출했는지, 도레를 돌보는 일과 관련해서 상의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얘기해요.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공유하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20대 초반에 만난 사람들이 다들 30대가 되었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 되고, 일을 해 나가는 변화를 겪는 동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요즘 마음은 어떤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즐거운 일은 뭐였는지 나누는 시간이 저희 가족의 생활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장치예요.

함께 사는 친구들이 가족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김주온 ▪ 아플 때요. 몸이 아플 때나 마음이 아플 때는 누군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나 얼마 전에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처럼 개인이 취약해지는 상황이 일어나면 '이럴 때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낼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질문자 ▪ 친동생분과 함께 살게 되면서 느낀 변화도 있었나요?

김주온 ▪ 제가 친구들과 살던 집에 동생이 들어온 거잖아요. 친구들과 동생이 서로 관계 맺는 걸 보면서 저와 동생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게 됐어요. 언니와 여동생 사이는 사실 항상 평등하지는 않잖아요.

질문자 ▪ 예전에는 좀 권위적인 언니였나요?

김주온 ▪ 'K 장녀'로서 기강을 잡으려고 했었죠.(웃음) 저는 서로 나이가 다른데 이름 부르면서 편하게 지내는 친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 동생이 저를 이름으로 부르려고 하면 '감히?' 이런 생각이 들고(웃음)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소한 부분인 것 같지만 제 안에 존재하고 있는 권력 의식인 건데 그런 부분을 돌아보게 됐고, 가족이란 어떤 존재인지 더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매일을 함께하는데, 왜 우리는 가족이 아닌가요?"

김주온 ▪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하면 다들 놀라세요. 저희의 부모님들도 '결혼하기 전에 임시로 그렇게 사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고요. '왜 결혼이나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람들만 가족이라고 여겨질까?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이 왜 내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가족'이 민법상으로나 사회적 인식 면에서나 너무 협소한 개념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오랫동안 사회정책의 기본 단위였고, 가족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여겨져 왔죠.

그런데 이제는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저희처럼 비혼 여성끼리 함께 사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사이인데 우연히 만나 공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결혼 제도 밖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동성의 연애 상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해요. 그런 사람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정상이라는 경계 밖으로 밀어낸다면, 시간이 갈수록 경계 안에 남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 거예요.

전통적인 구조의 가족은 아니지만 저희의 생활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일상적으로 행복한 순간이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소위 '정상 가족'을 이루지 못한, '좀 특이한 가족'이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질문자 ▪ 가족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겪은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김주온 ▪ 제가 밤중에 응급실로 실려 간 적이 있어요. 혹시나 수술을 하게 되면 서명이 필요해지니까 119 구급대원이 고향에 있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나와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은 나의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 없구나.'

지금은 일종의 사회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공공주택에는 저희가 한 가족으로서 입주 신청을 하기도, 실제로 입주를 하기도 어려워요. 2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다녀야 하니까 좀 더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가지고 싶은데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 제도나 주거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혈연이나 혼인 외의 방법으로 구성된 관계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김주온 ▪ 저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혼이나 혈연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내 생명, 재산, 혹은 그 밖의 소중한 것과 관련한 권리를 위탁할 수 있었으면 해요. 저희 가족 같은 사람들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이자 생활 공동체로 인정받았으면 좋겠고요.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받지 않고도 내가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질문자 ▪ 김주온 님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김주온 ▪ 제게 있어 가족은 함께 일상을 보내면서 서로를 돌보는 존재예요.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를 돌보는 역량을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친구들과 동생뿐 아니라 도레도 저를 돌봐주거든요. 사실 존재만으로도 저를 돌봐준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돌봄이 흐르는 관계'가 가족관계죠.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라면 그게 누구든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관계를 우리 사회가 가족으로 인정해 주고 받아들여 줬으면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직업 1위였던 건 예전 이야기, 지금의 직업 만족도 어떻냐고요?

OPQR_초등교사 현운석
17년 차 초등교사, 초등학생 학부모,
'실천교육교사모임' 활동가

질문자 ▪ 어릴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셨나요?

현운석 ▪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수능 점수에 맞춰서(웃음) 대학에 진학했어요. 교생실습을 하면서 아이들을 처음 만났는데 '아, 이 직업 괜찮겠다. 보람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길이 제 길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준비한 끝에 교사가 됐죠.

질문자 ▪ 교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뿌듯하거나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요?

현운석 ▪ 뿌듯한 순간은 매일 있어요.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성장하니까 보람을 종종 느껴요. 힘든 순간이라면, 교사로서의 자아와 학부모로서의 자아가 충돌할 때예요. 제자들에게는 "갈등도 충분히 경험해 봐야 해. 싸워 봐야 크지.", "어려운 것에 도전해 봐야 해."라고 말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다르거든요. 제 아이가 되도록 다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화초처럼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자아가 종종 부딪힙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이 사회에 중요한 존재인가?'

현운석 ▪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 사회에게, 국가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묻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질문자 ▪ 요즘 초등학교 현장은 어떤가요?

현운석 ▪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꽤 많은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돈 많은 백수'예요. 장래 희망 적는 곳에 연봉을 적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적인 수준, 지나치게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파악하고 연구해서 교육적인 처지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교육활동을 추진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점점 늘어난다는 문제도 있어요. 제가 2009년에 시골 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는 아이들과 같이 개울가에 놀러 가는 게 체험학습 활동이었거든요. 아이들과 방과 후에 개울가 가자고 약속만 하면 됐어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체험학습 하나를 계획하려면 공문 써야죠, 현장 동의 받아야죠, 학부모 동의 받아야죠, 아이들 보험 가입도 해야 합니다.

질문자 ▪ 보험도 들어야 하나요?

현운석 ▪ 그럼요.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무슨 일이 생기면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해요.

심지어는 배상까지 해야 하고요. 책임에 대한 부담이 압박이 되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충분히 시켜 주기 어려워요.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할까?

현운석 ▪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교사가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건 굉장히 섭섭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학생 수라면 교사가 이 정도만 있어도 돼.'라는 1차원적인 주장이거든요.

학생 수는 줄었지만 맞춤형 교육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커졌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학생이 전체의 약 15%라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한 반의 학생 20명 중에서 3명이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게다가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를 가진 아이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정서적이나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죠. 담임선생님 한 명이 이 아이들을 다 지원할 수는 없어요. 전문 인력이 더 필요하죠. 우리 아이를 돌봐주는 선생님이 많아지면 더 좋지 않나요?

잠재적 이탈자가 되어 가는 교사들

현운석 ▪ 교직을 떠나는 동료들이 많아졌어요. 휴직을 하시거나 그만두시거나 이직을 하시죠. 예전에는 학교가 평생직장이라 생각하고 인생 계획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언젠가 그만둘 수도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잠재적 이탈자'가 되어 가는 거죠. 보고 있으면 씁쓸합니다. 교사가 기피 직업이 되어 간다는 걸 여실히 느껴요.

질문자 ▪ 악성 민원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요?

현운석 ▪ 교사들끼리 대화를 해 보면, 1년 동안 악성 민원을 한 건도 겪지 않는 담임 교사는 거의 없어요. 한 건 때문에 1년 내내 괴로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악성 민원은 교실을 넘어서 학교 전체를 흔들기도 하죠.

저는 교사 단체에서 갈등, 분쟁 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일을 해요. 저희가 뵙는 선생님들 중에는 악성 민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다가, 도저히 막기 어려운 수준이 되는 바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후유증은 정말 오래가요. 몇 년 동안 휴직하시기도 하고 아예 교직을 떠나시기도 해요.

질문자 ▪ 보통 어떤 민원이 들어오나요?

현운석 ▪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교사가 아이를 평소처럼 지도했는데 그날따라 아이의 기분이 상해서, 부모님이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는 건이죠. 그렇게 되면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실제로 아동학대가 일어났는지 아닌지 확인받기도 전에 교실의 아이들과 분리되어야 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교육청 조사도 받고 지자체 조사도 받아요. 평소와 같은 멘탈을 유지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방송에 나와서 널리 알려진 사례인데, 칭찬 스티커가 아동학대라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스티커를 받지 못하는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한동안 칭찬 스티커가 완전히 사라졌다가 2024년에 다시 부활했죠. 아이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령에 명시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보상으로 간식을 주는 것도 법으로 정해야 해?'라는 의문을 가지셨어요. 저희는 오래전부터 웬만하면 그런 보상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어요. 학부모님 항의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엄마, 아빠, 선생님도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

질문자 ▪ 악성 민원,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현운석 ▪ 교실에서 아이들끼리 싸우면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화해를 시켜 주셨잖아요. 아이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셨죠.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아이들이 치고받으면 바로 학교폭력 건으로 접수하고 처리해야 해요. 법령에서 정해 준 지침대로. 선생님과 학교는 개입할 수 없어요. 개입하는 순간부터 '학교가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담임교사가 억지로 사과하라고 했다'고 비난받을 수 있거든요.

학교가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학교의 재량권,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른 규칙이 생겨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 ▪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

현운석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해야죠.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하고, 선생님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일 거예요. 학교가 그런 곳이 되려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아야 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중요한 걸 배우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교사들이 '내가 학교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계속 생각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직업적인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중요한 존재라고 항상 표현해 주거든요. 덕분에 퇴근하면서 아이들을 떠올리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교사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대우는 그것과는 별개인 것 같아서, 그 점이 아쉽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제조업의 골든 타임은 지금! 수도권 집중 문제, 지역 소멸, 인구 감소는 모두 하나의 문제입니다

OPQR_경남연구원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전국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국장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제조업의 골든 타임은 지금! 수도권 집중 문제, 지역 소멸, 인구 감소는 모두 하나의 문제입니다

K-제조업, 역사상 최대 위기

박태웅 ▪ 오늘은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서도 제조업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자타 공인 제조 강국이잖아요. 코로나 위기 당시에는 마스크부터 진단 키트까지 국내에서 전부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도 들었죠. 그런데 요즘은 제조업이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는 말이 들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은 어떤 상태인가요?

남종석 ▪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군수산업 그리고 일반적인 제품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외에는 거의 없어요. 설계 부문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문제는, 2010년대 이후로 자본주의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세계 무역의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정체되어 있다는 건 제조업 전반이 침체됐다는 뜻이죠.

박태웅 ▪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잖아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네요.

남종석 ▪ 그렇죠. 이 와중에 중국이 우리를 빠르게 추격하는 중이고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저가격 경쟁자'인데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왔거든요. 우리나라로서는 경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을 쫓아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죠.

경쟁 압력에 처한 우리나라의 선택

남종석 ▪ 경쟁 압력 상황이라는 건, 시장 자체의 성장은 제약을 받는데 경쟁자들은 새로 진입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을 높여야 할지, 임금 인상을 제한해야 할지 결정해야겠죠. 우리나라는 자동화를 선택했어요. 압도적인 자동화를.

박태웅 ▪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쓰이는 로봇의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죠.

남종석 ▪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임금을 인상하고 나서 생산과정을 자동화했거든요.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자동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낮춘 거예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단순 대체 인력이 됐고 하청 업체 직원으로 전환됐죠. 그렇게 해서 임금이 양극화된 거예요. 노동자들의 암묵지에 의존하지 않고, 엔지니어들이 공정 혁신을 통해 구성한 생산과정에 따라 제품을 만들게 됐다는 것이 자동화의 또 다른 의미였어요.

박태웅 ▪ 경쟁 압력에 공정 자동화로 대처한다는 건 일부 대기업에 한정된 얘기가 아닐까요? 대기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일자리의 90%가량을 중소기업이 만드는데 그런 기업들이 자동화의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겠죠.

남종석 ▪ 중소기업의 상황은 대기업과 연결 지어 파악해 볼 수 있어요. 대기업이 만드는 최종재는 거의 모듈화되어 있거든요.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1차 벤더의 상당수가 대기업이에요. 2차 이하의 벤더들이 중소기업인데 이들의 기술력은 대체 가능해요. 그러니 중소기업에는 협상력이 없죠. 협상력이 있어야 공급가를 올리고 임금 인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상황은 못 되고 단가를 맞춰야 하니 임금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지역주의가 선사한 기회

박태웅 ▪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제조업에는 미래가 있나요? 어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제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남종석 ▪ 제조업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조업 전반의 앞날이 밝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 분야에 희망이 있습니다. 전자나 ICT(정보통신 기술) 쪽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기계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터빈 제조 분야는 비용 대비 경쟁력이 압도적이에요. 원전 관련 제조, 건설 부문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뛰어나고요.

이런 수준에 이른 나라는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뿐이에요.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는 기술적인 협력을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져요.

박태웅 ▪ 미국이 지역주의 전략을 택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을 배제하니까,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미국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이네요.

우리나라 제조업의 당면 문제는?

남종석 ▪ 우리 제조업의 문제점을 보자면, 일단 노동력 공급 측면의 문제가 있어요. 인구문제죠. 그다음으로는 기술력 측면, 가격경쟁력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진입하는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는데,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답이 없을 거라고 봐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희망을 보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5% 정도 되거든요. 그중 1%쯤은 외국인 노동자가 만들어 내는 수치예요. 미국 외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증가율이 더 높은 나라들도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점을 참고해서 인구와 관련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박태웅 ▪ 남녀 임금 격차가 정말 크다는 쿤제도 있잖아요.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70% 수준이죠? 노동력이 모자란다고 하지만, 사실은 임금 격차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인적 자원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닐까요?

남종석 ▪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남녀 고용률 차이가 제일 심한 나라예요. 30대 초반부터 남녀 임금의 차이가 심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연령대의 사람들은 정규직을 갖느냐, 아니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느냐의 갈림길 앞에 서요. 이 지점에서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나라 여성의 고위직 진출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여성 정치인 비율도 낮고요. 반면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가장 높죠.

박태웅 ▪ 30대부터 일어나는 차별과 역전의 기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노령화나 인구 소멸 위기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거네요.

남종석 ▪ 우수한 인적자원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킨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숙련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남종석 ▪ 제조업 종사자들의 숙련 수준을 유지하는 문제는 개별 기업 단위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살펴야 합니다. 노하우는 오래 일해야 축적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제조업에 인력이 유입되어야 하죠. 전통 제조업체는 거의 다 지역에 있는데,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해서 지역에 사람이 없어요. 수도권 집중은 인구문제이기도 하지만 산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통 제조업을 포기하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무너져요. 미국이 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공장이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남종석 ▪ 철강산업은 '산업의 씨앗'이라고 불리잖아요. 수많은 제품에 철이 들어가니까요. 어떤 제품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등의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에 철강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독일과 프랑스의 철강 제조사는 외부에 있어서 철강이 필요하면 수입해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내부에서 공급받을 수 있죠. 멀리서 오는 게 아니니까 가격이 싸고 납품 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우리나라의 기계산업, 소재산업도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지속되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고용 없는 성장' 문제에 대한 해답

박태웅 ▪ 제조업의 위기를 해소할 방법을 찾다 보면 '고용 없는 성장' 문제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을까요?

남종석 ▪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이 전체 고용의 8~9% 정도 됩니다. 유럽은 20% 정도예요. 탈산업화에 따라 산업계로 가지 않게 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한다는 의미죠.

박태웅 ▪ 공공부문이 유럽 수준으로 성장한다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이러한 변화를 위해, 우리는 세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남종석 ▪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세금을 더 내지 않고 더 나은 복지와 더 많은 일자리를 바라는 건 모순이죠.

제조업 노동자는 중산층이 될 수 있는가?

박태웅 ▪ 중소기업에 다니는 제조업 노동자도 중산층이 될 수 있을까요? 대기업에 다녀야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남종석 ▪ 제가 사는 경남 양산의 노동자들 평균 연봉이 약 4400만 원이에요. 대부분 2차 벤더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중위소득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거예요. 노동시간이 좀 길기는 하지만요.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더 어렵죠. 도소매업이나 요식업, 숙박업 같은 저부가가치 소비자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상위 20% 업체의 소득 비율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나머지 업체들은 큰 소득을 올리지 못해요. 자영업자보다는 임금노동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서비스산업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제조업은 고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정규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업체가 많거든요. 중산층 노동자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살고 즐겁게 생활했다면, 졸업 이후에 대학에 가든 그렇지 않든 적당한 일터에서 적당한 소득을 받으면서 살 수 있어야겠죠.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비상식이 일상이 된 요즘, 헌재의 현재 상황 언론은 책임이 없을까요?

OPQR_언론학자 정준희
한양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지식교양소셜클럽 '해시칼리지' 운영

정준희 ▪ '요즘 사람들은 언론 소비를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죠. 그런데 정작 언론 수용자들은 '나는 편파적이지 않은 언론을 원하는데 그런 언론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편파'라는 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나한테 맞으면 공정한 거고, 안 맞으면 편파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그 자체가 편파적인 태도죠.

언론이 신뢰를 잃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준희 ▪ 첫 번째 이유는 언론이 스스로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유는 오만함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언론을 무서워하거나, 신뢰하거나, 좋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죠. 그런데도 훈계조의 보도가 굉장히 많아요. 언론이 잘못했던 점이나 부족했던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부정하거나 다른 오만함으로 메꾸려는 태도도 종종 보입니다. 현재의 민주적인 환경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 언론이 일반 시민보다 더 정확한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출입처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 기업 등을 직접 출입하면서 내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죠. 그런데 기성 언론이 출입처에서 확보한 정보를 충분히 검증하고 잘 정제해서 제공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만 일삼고 있어요. 취재원의 이야기를 퍼다 나르는 수준에 불과한 기사만 내는 거예요. 그건 언론이 아니라 스피커죠.

내란 국면을 통해 드러난 기성 언론의 문제

정준희 ▪ 기성 언론의 문제를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지금의 내란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본질적으로 민주적 질서 위에서만 번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적 질서라는 건 모든 목소리가 동일하게 존중받는 질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민주적 질서, 헌정 질서를 인정하는 목소리라면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성 언론의 대부분이 나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적 헌정 질서를 존중한다는 제1 가치를 따르지 않아요. 실질적인 제1 가치는 '아무 말이나 보도한다'인 것 같아요. '돈이 되는 일은 더 많이 보도한다'라든가. 의견을 낸다는 명목으로 특정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권력 감시라는 명분으로 권력자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침범하면서 트래픽을 얻고 광고 수익을 얻으려고 해요. 이런 행태에 대한 반발감이 누적되어서 시민들이 새로운 언론을 통해 대안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미디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주길 바라나요?'

정준희 ▪ 윤석열 대통령이 '레거시 미디어는 편향돼 있으니 유튜브에서 정보를 보라'는 말을 했죠. 상당히 개탄스러웠어요. 자신이 국정 운영 책임자라는 인식이 명확하다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떤 레거시 미디어가 편향돼 있고,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라는 걸까요? '나를 비판하는 언론은 믿지 마시고, 나를 칭찬해 주는 유튜브 영상을 보세요.'라는 뜻이겠죠. 지위가 높고 사회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편협한 인식, 수준 낮은 인식에 근거해 정보를 얻고 있다는 걸 보여 주는 사례예요.

요즘 떠오르는 대안언론과 정치·사회 유튜버들은 신랄한 의견으로 '사이다'를 제공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팩트야!'라면서 속 시원해하지만, 알고 보면 팩트를 제공해서가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해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더 명확한 사실, 더 정제된 정보보다는 감정적인 충족에 끌리는 경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안언론과 편파적인 세력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준희 ▪ 그 두 가지는 원래 구별되어야 하거든요. '대안'이라는 말 자체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선택지를 의미해요. 좋고 나쁨에 대한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은 개념이죠. 편파성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무엇이 편파적인지 아닌지를 얘기할 때는 개인의 가치판단이 반영돼요. 흔히 언론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춰야 한다고 하는데, 모두를 똑같이 대하기보다 강자에게는 날카롭고 약자에게는 너그러워야 공정한 균형을 지킨다고 볼 수 있죠.

대안언론이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은 왜 생겨났을까요? 기성 언론의 시선이 이러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예전에 신문기자들은 방송기자들을 보고 '펜도 안 쓰고 스크립트만 읽는 앵무새'라고 했습니다. 방송기자들은 인터넷 언론이 시끄럽고 지저분하다고 깎아내렸죠.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언론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정보 환경이 필요한가? 필요한 정보를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언론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유튜브의 가짜 뉴스를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

정준희 ▪ 누군가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존재하는 제재 수단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중요해지죠. 저는 현행 체제가 좀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상파 방송사 앵커는 나름대로의 균형을 지키려 하고, 감정에 따라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방송사 내부 규정과 심의 규정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튜브나 뉴미디어 안에서도 이러한 질서가 잡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돼.'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과 '사려 깊게,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뿐 아니라 행정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제재를 받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이상적인 언론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력

정준희 ▪ 결국 구독자와의 관계, 독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독자상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민주적 가치, 진보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들어 줬으면 좋겠어. 누구보다도 잘 이야기할 자신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언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언론에게 보상해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구독료의 형태로든, 기부금의 형태로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붙는다면 그 광고는 구독자 또는 독자 덕분에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광고를 받기 위해서 뉴스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형태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좋은 언론을 찾기 어렵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는 좋은 언론을 키워 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 왔을까요? 막장 드라마를 보듯이 언론을 소비하지는 않았나요? '봐 주는 사람이 왕이지. 원하는 얘기를 해 주지 않는 언론이라면 구독 끊으면 돼.'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하지는 않았나요? 이런 건 전형적인 소비자의 태도거든요.

우리는 소비자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깊은 관계를 맺는 언론 하나쯤은 있어야 해요.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광고를 봐 주고, 상품을 판다면 사 주기도 하면서 언론의 성장을 돕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사회적 트렌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실망스럽더라도 오래 지켜보면서 사랑하고 아껴 주는 사람이 늘어나면 더 좋은 언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상위 5%를 꿈꾸며 루저를 양산하는 우리 사회, 이젠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요?

OPQR_고립 은둔 청년 지원자 유승규
은둔형외톨이 지원 기관 '안 무서운 회사' 대표,
은둔 생활 5년 경험

유승규 ▪ 과거에 5년 정도 은둔 생활을 경험해 봐서, 그런 처지에 계시는 분들을 돕는 '안 무서운 회사'를 창업하게 됐어요. 보통 6개월 동안 사회적 관계가 좀 부족한 상태에 놓여서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을 '고립'이라고 하고요. 이 문제가 지속돼서 장기간 칩거하는 상황은 '은둔'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은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외톨이' 또는 '은둔 청년'이라고 부르죠.

질문자 ▪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처럼 은둔 청년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 걸까요?

유승규 ▪ 전체 청년 인구 대비 은둔 청년의 비율을 보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일본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은둔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두 합한 수치거든요. 우리나라의 은둔 청년은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돼요. 가족 중 은둔 청년이 1명만 있다고 쳐도 100만 명 이상이 은둔 청년 문제의 당사자라는 의미죠. 심한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중증 우울증을 앓기도 해요.

고립과 은둔, 과연 소수의 문제일까?

유승규 ▪ 고립과 은둔은 굉장히 조용한 문제예요. 그야말로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죠.

일본에는 '8050 세대'라는 용어가 있어요. 80대 부모님이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돌보는 경우를 가리켜요. 고령의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치매 노인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다가 수십 년 동안 칩거 중이던 자녀를 발견하기도 해요. 엄청난 비극이죠. 그렇게 오래 은둔 중이었다면, 그 사람이 사회에 복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아무리 돈을 쏟아붓는다 해도 쉽지 않겠죠.

질문자 ▪ 대표님께서 직접 경험했던 은둔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승규 ▪ 20~23살 때는 가족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방에서 나오지 않았었고요. 군대에 다녀온 뒤인 26~27살 정도에는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죠.

질문자 ▪ 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셨나요?

유승규 ▪ 당시에 제가, 지금의 용어로 말하자면 유튜버 같은 분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는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주변에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고 느꼈고 고립감에 빠졌어요.

10대 시절에 같이 열심히 게임하던 친구들이 20대가 되니까 "난 이제 대학 가.", "난 취업한다.", "너도 이제 정신 차려."라고 말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은둔 생활이 시작됐죠. 방 밖으로 나가지 않은 지 일주일쯤 됐나 싶었는데 금세 한 달이 지났어요. 친구들이 불러도 안 나가고, 명절에 친척 집도 안 가게 됐죠.

예전의 저는 활발했거든요. 학생회장이나 동아리장 같은 친구들과 어울렸고, 주변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은둔 생활을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것조차도 어려워지더라고요. 학생 시절에는 상대방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양한 이유로 고립을 선택하는 청년들

유승규 ▪ 은둔 청년들은 으레 학창 시절에 따돌림을 당했을 거라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원인이 다양해요. 해외 유학 실패, 이혼, 직장의 해고 통보 이후에 은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소위 '엄마 친구 아들'로 불렸던 분들도 너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인생의 실패를 겪으면 누구라도 은둔 생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가 빠르게 변하니까 적응도 빠른 속도로 해야 하잖아요. 적응에 실패하면 뒤처지죠. 그런 일을 겪으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스펙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엮여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전체 학생의 5%도 안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다들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경쟁이 모든 면에서 나쁘지는 않겠지만, 경쟁을 중시하는 양육 방식이 모든 아이들에게 유효하지는 않잖아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삶이 있고, 자녀가 그런 삶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삶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리신 거죠. 하다못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더라도 행복하게 살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도요. 저는 '옳음 중독'에 빠진 부모님들이 자녀의 은둔을 부추긴다고 말해요.

은둔 생활을 극복하기까지

유승규 ▪ 은둔 생활 중에 저랑 비슷한 사람, 우울한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봤어요. 저보다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받고 싶어서요. 영화를 보다가 저 같은 사람을 '히키코모리'라고 부른다는 걸 알게 됐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저와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본에 'K2 인터내셔널 그룹'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등교 거부 학생, 은둔 청년들을 돕는 곳인데 우리나라에도 지사가 있어요.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외국에서 새롭게 생활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일본의 히키코모리, 호주의 니트족(진학, 취직을 하지 않고 직업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바다 건너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구나.' 싶었어요. 점점 자신감이 붙었고, 젊은 나이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됐죠.

외톨이 친구들을 돕기 위한 회사

질문자 ▪ '안 무서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유승규 ▪ 기본적으로는 셰어하우스 운영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10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립 청년은 기본 생활 습관이 무너진 경우가 많거든요. 하루 세 끼를 만들어 챙겨 먹고 청소를 하는 등의 습관을 유지하고, 놓치고 있었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른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재양육 시설인 거죠.

질문자 ▪ 직원분들 중에도 은둔을 경험한 분들이 계신가요?

유승규 ▪ 거의 모두 경험해 봤죠.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은둔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은둔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이분들의 존재 자체가 희망이거든요. 회복된 청년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은둔 경험이 있는 분들을 상담가로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 중이에요.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유승규 ▪ 공공영역에서 은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은둔하던 사람이 갑자기 풀타임으로 일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 다리가 필요하거든요. 일본에는 그런 일자리가 많아요. 15분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카페도 있어요. 히키코모리 자녀를 둔 부모님이 오픈하신 매장인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직원이 몇 시간씩 일합니다. 좋은 유인 요소가 있는 매장인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사회화 방안이 마련된다면 은둔 청년들이 단계적으로 자립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나를 위한 정책이 있구나.',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어려움을 겪더라도 극단적인 사고에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실패가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국민연금 개혁은 이제 시작이죠. 미래세대를 위해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OPQR_금융공학자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전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 본 인터뷰는 국민연금법 모수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우창 ▪ 어떻게 계산해 봐도, 2050년대 중후반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노인을 모시기 위해 세전 수익의 40%를 내야 하는 상황이 와요.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정부가 약속했던 연금액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1강 국민연금 진단하기

김우창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1980년대 후반에 도입됐으니까 35년 정도 지났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됐죠.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1200조 원 정도 돼요.

현시점의 보험요율은 9%죠. 월급을 받으면 그중 9%를 국민연금 기금으로 내는 겁니다. 40년 동안 내면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비율이 '소득대체율'이에요. 30년 동안 내면 소득대체율은 30%가 되고, 20년 동안 내면 20%가 되죠.

질문자 ▪ 교수님께서 계산해 주신 결과를 봤는데요.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30세부터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현재 50대인 사람들은 매달 27만 원을 내고 60대부터 매달 108만 원을 받는다고 계산해 주셨어요. 현재 10대, 20대인 사람들은 90만 원을 받고요. 2035년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에는 기금이 없어서 소득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김우창 ▪ 이대로 간다면 그렇겠죠. 현재 50대인 분들까지는, 제도 개혁 없이도 국가에서 약속한 만큼의 돈을 웬만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후 세대의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30대 초중반의 연금은 다음 세대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것이고, 2055년쯤에 경제활동을 하게 될 젊은 세대의 보험료는 월급의 30%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관련한 갈등은 결국 세대 갈등이에요. 세대별 차이가 너무 커요. 그리고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너무 많이 받아 갔으니 책임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젊은 세대가 느끼는 공포의 기저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이 깔려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2~3일 전, 그러니까 2024년 5월이었죠.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님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표되지 않았던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 중 부족 금액)를 공개해 버립니다. 그 금액이 1700조 원이었어요. 우리나라의 2024년 GDP가 2400조 원이거든요. GDP의 80% 정도가 모자라다는 의미죠. 국민연금공단의 현재 기금이 약 1200조 원이니까, 미적립 부채 1700조 원을 더하면 실제로 필요한 기금은 3000조 원인 거예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원인

김우창 ▪ 국가가 국민연금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반발이 심합니다. 국민들이 '나라가 내 돈 뺏어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도입 초기에는 후한 조건을 내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제도가 막 도입됐을 때의 소득대체율은 70%였어요.

김대중 정부에서 60%로 낮췄고, 노무현 정부에서 40%로 낮췄죠.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낮춰 간 거예요. 보험요율은 최초에 3%였고, 그 뒤로 6%, 9%로 올라갔죠.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연금 개혁은 2028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런 표현이 옳지 않다는 건 압니다만, 수치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기금 고갈의 원인은 누군가가 적게 내고 많이 받아 갔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변수는 인구예요. 우리나라의 20년 뒤 출산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1.2명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통계청에서는 작년에 추정을 포기했거든요.

기금이 고갈될 시점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인구를 살펴보면 전망이 좋지 않아요. '노인 부양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노인인구(65세 이상)가 몇 명인지를 나타낸 비율이에요. 기금 고갈 시점인 2055년 이후 20~3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비가 100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 1명이 어르신 1명 이상을 모셔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분들에게 소득대체율 40%만큼의 국민연금을 드리려면 내 소득의 40%를 넘겨야 해요. 이런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을까요?

제2강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해결할 방법

김우창 ▪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지죠.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소득대체율 40%짜리 국민연금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여기서 원가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내는 보험료와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수익금을 합한 금액이 내가 나중에 받을 연금액과 같아지려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 보는 거죠. 그러면 보험요율이 12%쯤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 갈 때쯤에 양당에서 연금 모수 개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보험요율은 약 13%, 소득대체율은 43~45% 정도로 조정해 보자는 데까지 합의했습니다. 더 많이 받고 싶다면 더 많이 내야 하니까요. 원가 정도는 내야죠, 우리가.

기금 고갈을 막을 개혁안

김우창 ▪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2024년 11월분까지 공개됐는데, 연평균 6.5%쯤 돼요. 지난 2년 동안은 수익이 잘 나온 편이었으니까 실질적인 수익률은 6% 정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사람들은 흔히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위험 대비 수익률을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투자해서 연평균 6%의 수익을 계속 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1700조 원의 부족분, 미적립 부채가 남죠. 이번 정부에서부터 돈을 보탤 수밖에 없어요. 연간 GDP의 1% 정도가 필요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개혁할 수는 없으니까 2030년부터 개혁을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그런 계산이 나와요. 2030년부터 정부가 부채를 조금씩 갚아 나가자는 거예요. 성공한다면 기금이 영속될 수 있어요. '기금이 영속된다'는 건, 인구구조의 변화에 상관없이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개혁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개혁안 시행 이후에 모든 세대가 13%의 보험료를 내고, 모든 정부가 GDP의 1%만큼 재정 투입을 하면 국민들은 소득대체율 44~45%의 연금을 쭉 받을 수 있게 돼요. 모든 세대가 지금에 비해 보험료를 조금씩 더 내게 되겠지만, 세대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 현상은 나타지지 않을 거예요.

정부 재정 투입의 불가피성

김우창 ▪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가장 좋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길에서 이미 멀어졌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기회가 왔지만 우리 사회가 놓쳐 버렸어요. 국민연금 기금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 투입은 기정사실이에요. 언제부터 하느냐가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 필요성을 인정하고 빨리 투입하면 됩니다. 단군 이래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고, 나라가 가장 부강한 시점인 지금부터 기여하자는 거예요. 미적립 부채 1700조 원은 정부가 기여하기 시작하면 금방 사라집니다. 정부가 당연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강 우리가 꿈꾸는 노후

김우창 ▪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9월에 개혁안을 냈어요. 저는 그 안을 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잖아요. 항상 세부 사항이 문제죠. 정부에서 낸 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소급해서 깎겠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보험요율을 13%로 올립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은 5.5% 정도의 투자수익을 올립니다. 셋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되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걸 넣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란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의 변화와 연동해 연금액 또는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핵심은, 물가 인상률에 따라 연금액을 올려 주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잖아요. 5년 전의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정부안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실질적인 연금액을 깎아요. 소득대체율이 현재에 비해 4~8% 정도 삭감됩니다. 물가는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니까 80대에 이르면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40~50%까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연금액의 가치를 낮출 거라면, 차라리 소득대체율을 내리자고 말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연금액을 파악하고 인생 계획을 세우죠.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에 이르면 노동할 수 없고 병원비를 줄일 수도 없을 텐데. 국가가 실질적인 연금액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판 고려장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아직 남아 있는 가능성

김우창 ▪ 공적연금의 가장 큰 가치는 개개인의 리스크를 사회가 분담하는 데 있거든요.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사회가 어느 정도 해소해 주는 거죠. 삶의 질 측면에서도 가치를 찾을 수 있어요. 65세까지 열심히 일해서 연금을 받는 시기가 오면 좀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죠. 부인하고 손잡고 산책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손주들 찾아오면 용돈 얼마라도 쥐여 주면서요. 공적연금은 그런 삶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줍니다. 결국 연금을 바라보는 사회의 관점은, 궁극적으로 그 사회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현재 국민연금은 위기를 맞고 있지만, 연금 개혁이 잘 이루어진다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소득 보장성·재정 안정성·지속가능성·세대 간 형평성 면에서 모두 훌륭한, 다른 국가가 단 한 번도 보유하지 못한 국민연금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노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

못 배웠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조업과 지역을 살리자고요? 암담한 지역 청년들의 현실을 아십니까?

OPQR_글 쓰는 용접공 천현우
H조선소 용접공, 「쇳밥일지」 저자

천현우 ▪ 저는 10년 동안 제조업계에서 일했고 현재는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쇳밥일지」라는 책을 썼어요. 책을 내고 나서 주변에 엄청 징징거렸거든요. '초판을 3000부나 찍었다는데 잘 팔리지도 않고, 나 큰일 난 것 같다. 어떡하냐.' 이렇게요. 책이 안 팔리는 기념으로 형들한테 술을 얻어먹고 있는데 트위터 알림이 떴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제 책을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날이 2022년 8월 31일이었어요.

질문자 ▪ 책을 통해 무언가가 바뀌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천현우 ▪ 책을 쓴 건 제조업에 몸담은 지 8~9년 차였을 때라, 이 업계가 쉽게 바뀌지 않으리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은 전달해 보고 싶었죠. 제조업 종사자들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수가 적지도 않은데, 우리의 목소리가 이대로 묻혀서야 되겠는가 싶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추천을 받고 나니까 대통령님이 이 문제를 지켜봤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신나더라고요.

23년 차 베테랑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업계

질문자 ▪ 용접 일은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어요?

천현우 ▪ 20대에 전문대를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갔는데, 제 업무가 매우 단순한 노동이었어요. 프레스에서 문이 찍혀 나오면 그걸 받아서 다시 걸어 주는 일이었거든요. 그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나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임금도 오르지 않을 것이고 사회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용접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제 사수가 용접하는 방법을 보여 주시더라고요. 재미있어 보였어요. 그걸 계기로 용접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질문자 ▪ 청년 용접공으로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천현우 ▪ 조선소에서는 왜 최저임금만 주는지 묻고 싶어요. 사실 제 책은 절반의 성공만 거둔 셈인데, 정치권에서는 환호를 보낸 반면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반응한 분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다는 게 뭐 새삼스러운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썼어. 여긴 늘 그랬잖아.'라는 거죠.

2022년에 유최안 당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님이 경남 거제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본인이 직접 0.3평짜리 철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독(dock) 바닥에 붙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극한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유최안 부지회장님은 베테랑 용접사거든요. 배에서 23년 동안 용접을 하신 분이 최저임금을 받았어요. 보통은 기본급에 상여금을 얹어 주는데 상여금 없이 기본급만, 그것도 가장 낮은 금액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상여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 금액이 600만 원 정도예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23년간 일해 온, 지난 2015년부터 임금 체불을 감수하면서 불황을 버텨 온 경력자가 연봉에 600만 원을 얹어 달라는 것이 과한 요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측은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천현우 ▪ 조선소의 고용 형태는 좀 특이한데,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원청 업체 직원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정규직이죠. 두 번째 축은 하청 업체 직원입니다. 전체의 80% 정도 됩니다. 기업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임금 등 여러 부분에서 원청 업체 쪽에 비해 사정이 열악하죠. 세 번째 축은 '물량 팀'입니다. 일당직 노동자를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 기술이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질문자 ▪ 작가님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천현우 ▪ 저는 하청 업체 소속이에요. 원청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을 다 합쳐도 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선업계 종사자 수가 9만 명인데, 정규직을 그 정도만 뽑는 거죠.

질문자 ▪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사이의 차이가 큰가요?

천현우 ▪ 원청 업체 노동자가 다치면 회사 측에 다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노조가 어느 정도 방어해 주니까요. 하청 업체에서는 산재 처리를 해 주면 다행이고, 치료비만 내 주고 없었던 일로 해 버리는 일이 적지 않아요. 그런 관행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직도 많을 거라고 봐요.

또. 원청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하청 업체에서는 근속연수가 올라가도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쪽 업체의 기본급은 비슷한데, 인센티브에서 차이가 확 벌어지죠. 하청 업체에서도 숙련자가 되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정규직 임금을 넘기지는 못합니다.

조선소에 사람이 없는 이유

질문자 ▪ 조선소에 사람이 없다는 뉴스가 나오곤 하는데, 실제로 일할 사람이 없나요?

천현우 ▪ 사람이 많이 오기가 어려운 구조죠. 아시겠지만 조선소는 다 남쪽, 지방에 있거든요. 사실 '처박혀 있다'는 표현이 적절해요. 일반적인 생활 지역과는 한참 떨어진 곳에서 가장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데 최저임금을 받으니, 누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오는 사람이 없죠. 왔다가도 금방 나가기 일쑤예요. 그도 그럴 것이 들어와 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근속 20년 차 베테랑들이 상여금 300%만 달라, 임금 인상은 바라지도 않는다면서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저게 우리의 미래구나. 이용당하다가 저렇게 끝나는 거야.' 하고 손절해 버리는 거죠.

외국인 인력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분들의 존재가 내국인 인력의 임금 천장을 만듭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훨씬 적으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은 임금을 많이 받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긴 시간 동안 험한 조건에서 일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원해서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조건 개선을 막게 되는 거죠.

지방 청년들의 이야기가 빠져 있는 청년 담론

천현우 ▪ 예전에는 '중공업 가족'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성별 역할을 완전히 나누어서, 남성은 돈 벌어 오고 여성은 육아를 하는 모델이죠. 저희 세대는 더 이상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요? 사람이 없고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서는 대안을 찾기 힘들어요. 지방의 상황을 수도권에 사는 분들도 알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류에 집중하거든요. 청년 담론이 나올 때 먼저 마이크 잡는 분들이 누구인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명문대 출신 엘리트들이 많죠. 그분들의 이야기 안에는 지방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모르는 세계 얘기들만 하시더라고요. 국민 중 50%가 수도권 바깥에서 사는데 이 50%를 지우면 안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동남권 남학생들에게는 공장 아르바이트가 일반적이거든요. 수도권에서 과외 아르바이트가 흔하듯이, 이쪽에서는 공장 아르바이트가 흔합니다. 그렇게 제조업에 진입해서 말뚝을 박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제조업 공장에서 나오는 물품들은 수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청년들 중에는 외화를 벌어 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큰일을 해내고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인데 치하하기는커녕 왜 헌신짝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묻혀 있는 우리의 얘기를 누군가는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청년들은 왜 고향을 떠나게 될까요? 부울경 산업도시, 더 늦기 전에 바뀌어야 합니다

OPQR_지역 연구자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저자

박태웅 ▪ 지역·청년·우리나라의 기간 제조업을 묶어서 들여다보고 그 속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얘기를 나눠 보고 싶습니다.

양승훈 ▪ 부산·울산·경남, 소위 '부울경'은 좀 재미있는 지역입니다. 호남이나 강원 지역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과반수가 수도권이라고 답하거든요. 부울경의 경우에는 60~70%가 일자리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지역에서 살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부울경의 인구는 2015년까지 늘어났습니다. 남성들은 제조업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들이 취업하기도 어렵지 않았어요.

흔들리는 부울경 인구, 그 이유는?

양승훈 ▪ 이 지역에서 중요한 산업은 조선업입니다. 20만 명을 고용했거든요. 그런데 조선업 위기가 닥치면서 고용 인원이 반으로 줄었어요. 부울경의 인구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부울경에서 해마다 2~3만 명의 청년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중 60~70%가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대학 졸업 이후 1~2년 정도는 부울경에 머물더라고요. 하지만 20대 중반이 되면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남성들은 떠났다가도 돌아올 수 있어요. 제조업 일자리가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돌아올 만한 유인 요소가 없는 거예요.

지역에는 좋은 여성 일자리가 많지 않은데,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승진 가능성입니다. 조직 안에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임원은 고사하고 부장까지 올라가기도 힘들죠.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커리어 구축입니다. 프리랜서나 전문가가 되어서 업계에서 인정받으면서 성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여성들

양승훈 ▪ 그렇다면 여성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돌봄 일자리,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죠. 요즘 지역에는 외국인이 많으니까 한국어 교사가 되는 분들도 있고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높은 숙련 수준이 필요하지 않은 이른바 '핑크칼라 잡'이 대부분인데 여성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크게 선호하지는 않죠. 청년 여성의 일자리가 없는 지역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요?

한진해운이 살아 있었던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오퍼상'이라고 불리던 중개무역 회사들이 부산 쪽에 꽤 있었어요. 일본어나 영어를 잘하는 분들, 대졸 여성분들이 그런 회사에 많이 취업했었죠. 이제는 그런 일자리가 거의 사라지고 제조업 생산직 위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에 취업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이고요.

공과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25%를 넘어섰고 자연대학의 여학생은 전체의 절반이에요. 우수한 인력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기업체들은 이들을 빠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이제는 엔지니어라고 해도 예전처럼 완력 쓸 일은 없어요. 여성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석유화학 회사는 여성들이 일하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죠. 여성 건강에 좋지 않다면서요. 지금은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서 여성을 채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채용 관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기업 생산기지로서의 지역 제조업, 지속 가능한가?

박태웅 ▪ 지역과 제조업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하나요?

양승훈 ▪ '지역은 계속 대기업의 생산기지 역할만 할 것인가, 아니면 창업의 기회가 있는 지역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지역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현재 지역의 제조업체들은 외주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지역에는 공장만 있고 생산직 일자리만 있어요. 엔지니어 일자리는 다 수도권에 있죠. 현대자동차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공장을 울산에 마련해 뒀지만, 기반 설계를 하고 생산 공법을 정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일은 다 수도권에 있는 남양연구소에서 맡고 있잖아요.

박태웅 ▪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 지점이 있어요. 저는 IT 업계에서 수십 년 일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사용자에 대해 모르면 아주 해괴한 일을 하거든요. 연구소와 공장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을까요? 제품을 개발하든 생산 공법을 결정하든 공장의 상황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R&D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네요.

양승훈 ▪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현실의 공장을 가상으로 실시간 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강화하는 추세고, 현대자동차의 디지털 트윈 수준은 거의 완성형이에요. 그에 비해 조선업 쪽은 잘 안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만드는 과정이 도중에 계속 바뀌니까 배를 지으면서 R&D를 해야 하거든요.

연구소와 공장이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 때문에 웃지 못할 일도 생겨요. 현대중공업 글로벌 R&D센터 직원이라면 경기 판교에서 근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장이 있는 울산 현장에 계속 가야 해요. 월요일에 출장 가서 금요일에 올라와요. 회사의 입장은, 일단 판교에서 근무할 거라고 해야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는 셔틀버스를 돌리는 회사들이 늘어났어요. 가족들이 지역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회사 직원만 지역의 사택이나 기숙사에 살면서 주말에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이용할 셔틀버스를 공급해 주는 게 부울경에 공장을 둔 대기업들의 중요한 미션이었죠.

예전에는 부산대, 경상대,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 나온 친구들은 취직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 지역에는 제조업체가 많고 엔지니어 일자리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 친구들이 수도권 회사에 지원해야 해요. 엔지니어링이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 버려서요.

대기업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

양승훈 ▪ 제조 관련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지역에 착 달라붙어 있었던 이유 중 첫 번째는 인력이고요. 공급사들이 다 지역에 있어서 부품을 제공받기 편리하다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다 보니 지자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장점도 존재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죠. 좋은 인력은 수도권에서 뽑아서 수도권에 배치하면 되고, 저렴한 양질의 부품은 글로벌 벤더한테 수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역에 머물러야 할 유인 요소가 사라진 거죠.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에서 팔 거라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면서 리쇼어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리쇼어링에 골몰할지언정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공장을 배치해야 이 사회에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은 하지 않아요. 그럴 여지도 없고 의지도 없죠.

박태웅 ▪ 많은 벤더 업체, 공급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창업자분들은 은퇴 시점에 이르렀고 젊은 축의 노동자분들은 50대입니다. 이분들이 퇴직하면 뒤를 이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업체를 물려받을 사람도 없을 테고요. 운영이 지속될 것 같지 않으니 공장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어렵겠죠.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양승훈 ▪ 한계에 다다른 기업과 신규 기업을 매칭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예요. 지역의 신규 창업자들이 서울로 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에는 굉장히 좋은 생산설비가 있고, 연구개발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점을 창업자들에게 홍보하고 지역 제조업체와 연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중물이 될 만한 대규모의 투자도 필요해요. '이 지역에서 매출 1조 원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기적으로 인큐베이팅하겠다'는 식의 비전을 줄 수 있다면, 지역 기업과 지역 주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지역의 여성 청년들을 위해 여성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에도 공공 영역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해요.

지자체에서는 계속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대기업이 지역에 남으려면 지역에 혁신 생태계가 존재해야 해요. 산학연이 협업하는 산업단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혁신기업들이 배출되어야 해요. 소부장 업계에서 스마트 팩토리 1등 기업이 나오고, 글로벌시장에서 주목하는 벤더사들이 나오고, 유니콘 기업들이 생겨난다면 지역은 변할 수 있어요.

'이 지역에서 창업해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곳의 중소기업은 물량을 겨우 해치우는 곳이 아니라 성장하는 회사구나.'라는 인식이 퍼지면 청년들이 지역에 남겠죠. 대학들은 지역 기업들에 필요한 기초 기술과 응용 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이 자리를 잡아 나가면 선순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조 기반이 없는 호남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질문자 ▪ 호남의 지역 소멸 문제도 심각한데, 호남에는 제조 기반이 없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양승훈 ▪ 동서 축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조선업 상생 협의체'라고, 정부와 같이 조선업에 대한 협의를 하는 채널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부산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부산에서 목포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승용차로 4시간 걸려요. 동서 축이 그 정도로 미발전 상태예요. 이번에 대구와 광주를 철도로 연결하기로 했죠. 남부 지방의 동서 지역도 서로 연결되어야 해요. 영호남을 연결해서 지역의 잠재력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공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

질문자 ▪ 고졸자들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승훈 ▪ 기본적으로는 임금 인상을 계속해야 해요. 최저임금 인상도 그런 의미에서 꾸준히 해 나가야 하고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강제를 하는 방식으로 임금 인상을 압박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공장을 회피하고 플랫폼 노동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공장에 들어가면 최저임금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공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 준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제2의 BTS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OPQR_대중문화평론가 차우진
작가, '차우진의 엔터문화연구소' 운영

차우진 ▪ 2024년을 기점으로 음악 저작권 산업의 규모가 영화 저작권 산업을 뛰어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매일 새로 업로드되는 노래가 12만 곡이에요. 생산되는 음악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그중에 인기를 얻는 음악은 소수이고 양극화는 계속 심해지는 추세예요. 경제학자들은 '음악시장은 전적으로 운이 지배하는 시장'이라고 말해요. 슈퍼스타를 만들 수 있는 명확한 이론이나 방법론은 없거든요.

그런데 케이팝 업계에서는 스타가 비교적 잘 나오는 것 같다고들 하죠. 보통은 상징적인 위치에 도달하는 스타가 만들어지기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적어도 5년 이상은 활동해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면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케이팝 스타는 3~5년이면 나옵니다.

"10년 뒤에도 케이팝은 케이팝일까?"

차우진 ▪ 저는 10년 뒤의 케이팝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아시안팝'이라고 불리게 될 수도 있죠.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케이팝을 음악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케이팝의 작곡가는 거의 외국인이에요. 유럽에서 사 온 곡을 우리나라에서 약간 커스터마이징한 다음 발표하는 거죠. S.E.S가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로 성공을 거둔 뒤부터 이 구조가 보편화됐어요.

기획사가 음악만을 팔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아티스트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모델을 적용했어요. 외부에서 사 온 음악을 엔터테인먼트로 재가공한 거예요. 케이팝 아티스트는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매력을 보여 주기도 하니까, 그분들의 활동은 종합 엔터테인먼트라고 볼 수 있죠.

음악계에서는 전에 없던 리듬이 생겨나면 장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케이팝은 리듬이 새로운 음악이 아니라 형태 면에서 새로운 음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장르라고 보기 어려워요.

한국의 팝을 의미했던 '케이팝'은 이제 아티스트, 팬덤, 문화, 기업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차우진 ▪ 요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케이팝과 비슷한 음악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케이팝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음악들이고, 뮤직비디오까지 비슷해요. 언어만 다를 뿐이죠. 그렇다면 이 음악들은 케이팝일까요? 지금은 국적에 따라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태국의 음악이면 티팝(T-pop), 필리핀의 음악이면 피팝(P-pop)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굳이 나누기에는 음악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음악 유통사, 세계적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국적별 구분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차라리 '아시안팝'이라는 이름으로 묶는 편이 효율적이죠.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찾아서 들을 테니까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케이팝은 아시안팝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어요.

2024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앨범 10개 중 9개가 케이팝 앨범

질문자 ▪ 현재 케이팝의 실제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차우진 ▪ IFPI(국제음반산업협회)에서 매년 리포트를 발행하는데, 2024년의 음반과 음원 판매량, 콘서트 판매 수익 등을 수치로 환산해서 상위 10명의 아티스트를 뽑았어요. 그 안에 케이팝 아티스트가 4팀쯤 들어갔어요. 엄청난 거죠.

최근에는 BTS의 소속사로 유명한 하이브가 유니버설뮤직그룹과 음반·음원 독점 유통 계약을 맺었어요. 유니버설뮤직그룹은 세계 최대의 음악 기업이거든요. 당연히 세계 음악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예요. 하이브나 SM은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 굉장한 성장을 보여 준 대단한 기업이지만, 글로벌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로컬 인디 레이블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케이팝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가 2015~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드라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미국 드라마 한 편을 만드는 비용으로 한 시즌을 제작할 수 있는 데다, 크리에이티브 면에서도 훌륭해서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에 투자했던 거예요. 케이팝 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목이 쏟아지고 있는 데 비해서는, 전체 시장 안에서 실제로 차지하는 지분이 아직은 매우 적어요. 성장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케이팝이라는 사업 모델의 첫 번째 요소, 매니지먼트 IP

차우진 ▪ '케이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케이팝'은 음악 장르라기보다는 사업 모델에 가까워요.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삼기에 용이하죠. 케이팝이라는 사업 모델의 핵심은 저작권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IP(지식재산권)가 있는데, 하나는 매니지먼트에서 나오는 IP이고 다른 하나는 음악 자체에서 나오는 IP예요.

매니지먼트 IP는 곧 아티스트의 IP죠. 과거의 음악산업은 음반을 만들어서 많이 판매하는 비즈니스였어요. 음반을 많이 판매할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아티스트를 미디어에 노출시키기도 하고 콘서트를 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음반시장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관계자들이 다각도로 고민하게 됐어요.

미국은 콘서트를 대형화하는 방식으로 풀었어요. 콘서트 횟수가 늘었고 티켓 가격이 계속 올라갔죠. 우리나라, 특히 케이팝 업계는 음반을 계속해서 많이 파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했어요. 초기의 음악 CD는 얇은 투명 케이스 안에 CD와 가사지만 들어 있는 '주얼 CD' 형태였는데, 이제는 케이스가 두꺼워졌어요. 그 안에 사진집도 넣고 포토 카드도 넣어요. 별도의 굿즈가 포함되기도 하고요. 음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거죠.

팬들이 음반을 비롯한 아티스트 관련 물품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는 케이팝이 아티스트의 매력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아티스트의 매력을 보여 주는 콘텐츠나 제품은 모두 수익화할 수 있어요. 보통 아티스트가 팬을 확보하려면 일단 유명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케이팝 아티스트들은 유명해지기 전, 아예 데뷔하기 전부터 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습생일 때부터 대중에게 노출되거든요.

아티스트의 매력을 높이려는 이러한 '기술'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극대화됩니다. 시청자들은 데뷔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응원하고 팬이 되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케이팝은 수익성을 만드는 데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케이팝이라는 사업 모델의 두 번째 요소, 음악 IP

차우진 ▪ 음악 저작권이란 작사·작곡·편곡 등의 작업으로 발생하는, 음악 자체에서 나오는 권리예요.

질문자 ▪ 여러 가지 작업으로 하나의 음악이 만들어지면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되나요?

차우진 ▪ 참여한 모두가 나눠 가져요. 한 곡의 케이팝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여섯 명의 작곡가, 그리고 대여섯 명의 작사가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반을 만드는 작업 전체를 총괄하는 '프로듀서'도 존재하고요. 3분 30초짜리 노래 파일 하나의 권리자가 10명씩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케이팝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음악 저작권이 만들어 내는 가치도 점점 커지는 추세죠. 케이팝은 매니지먼트 IP와 음악 IP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케이팝의 가능성, 케이팝이 보여 주는 비전은 앞으로 더 널리 주목받을 거라고 봐요.

'케이팝은 현재의 위상을 지킬 수 있을까?'

차우진 ▪ '케이팝은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또는 '현재의 위상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답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에 글로벌 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케이팝 공연장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사업자들이 비즈니스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를 풀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요. 하나하나가 중요한 사안이죠.

케이팝이 발전해 나가려면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는 착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연습하는 10대 친구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들을 보호하기보다 사업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획사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해요.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케이팝 아티스트 한 팀을 만드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투입돼요. 이 자원을 모두 슈퍼스타를 만드는 데 써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떠한 생태계든 지속 가능하려면 중간 그룹이 탄탄해야 하잖아요. 우리나라 음악계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글로벌 스타 한 팀이 잘되는 것보다는 작곡가나 싱어송라이터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훨씬 중요해요.

중간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돈이 안 될 것 같은' 분야에 있어요. 홍대의 인디 씬, 힙합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곳 말이죠. 식물을 키우려면 겉으로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가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비료를 줘야 해요. 그래야 굵직한 줄기도 만들고 꽃도 피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커다랗게 자란 나무 앞에 서서 열매를 계속 따기만 하고 있어요.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생 시대, 여자도 군대 가라! 근데 한국 군대, 진짜 성평등한 거 맞나요?

OPQR_전직 군사경찰 전미선
육군 장교로 20년간 군복무, 현 성폭력 예방 강사

전미선 ▪ 제가 입대한다고 했더니 대학 동기들이 다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저한테는 오빠가 있는데 여군을 본 적이 없어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이들은 군대 주변에서 자랐고 엄마가 매일 군복 입고 출근하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느 날 놀라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여자는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였어?"(웃음)

군대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왜 군대에 왔느냐?'였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IMF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했고, '좀 더 큰 세상을 보고 싶다, 남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당당하게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헌병이라고 불렸던 군사경찰이 됐습니다.

질문자 ▪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주인공들이 군사경찰이었죠?

전미선 ▪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저한테 실제 군사경찰도 저러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작품이라 실제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무하면서 느낀 현역 군인의 어려움

전미선 ▪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일정 연령이 되면 일단 모두 신체검사를 받고 군대에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군대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한 해에 수천 명씩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내에서 문제가 생겨 자살하는 인원도 있어요.

병력들을 관리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병력들을 데리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병사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인원을 관리해야 하는 초급 간부들의 상황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군대라면 훈련이나 경계근무 같은 군사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병력 관리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실정이에요.

질문자 ▪ 전직 군사경찰 전미선 님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신가요?

전미선 ▪ '제 딸아이가 군대 병사로 들어온다면, 잘 복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제가 입대할 때는 제가 속해 있는 대대에 여군이 한두 명 들어왔거든요. 요즘에는 체감상 한 대대에 여군이 열댓 명쯤 있는 것 같아요.

질문자 ▪ 여군의 비중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전미선 ▪ 저출생 문제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대학교가 문을 닫을 정도니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주요 대학들이 ROTC 병력을 절반도 못 채웠다고 해요. 들어오는 인원은 적은데 중간에 전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필요해진 거죠. 여성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여군이 질적으로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남군이 버린, 기피하는 자리에 여성이 투입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작전 업무거든요. 그러니 작전과장은 중요한 직책이죠. 하지만 여군은 인사과장이나 군수과장을 맡게 돼요. 전방 중대장이 아니라 신교대(신병 교육대) 중대장 같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진급을 하려면 중요한 보직을 맡아야 하고 전방에 가야 하고 작전 업무를 해야 하는데, 여군은 많은 경우 군대 내의 주변적인 일을 담당하게 돼요. 그러다 나중에 좋은 경험을 쌓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급에 실패하는 거죠. 인구절벽 시대가 왔고 군대에 들어오는 여성들은 계속 늘어날 텐데,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군의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내부를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에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개인적 문제다’라고 말하는 대통령

전미선 ▪ 「2024 시민 국방백서」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에서 발간한, 시민이 만든 국방백서입니다.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국방백서」는 국방부의 정책과 제도를 국민에게 소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자인데,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담아 보완하고자「시민 국방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필한 부분은 군대 내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양성평등을 넘어서 성평등으로’라는 제목의 글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방부의 피해자 보호 제도는 다른 어떤 공적 조직보다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국방부에는 이슈가 많았으니까요. 지난 2021년에 공군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끝에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오랫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군 인권 보호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가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잘 시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정책과 제도만으로 피해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감시해야 합니다. 군대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도 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겠다는 군 수뇌부와 주요 지휘관들의 의지예요.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개인적 문제다’라고 발언했거든요. 그 말이 국방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공적 조직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군대’란?

질문자 ▪ 우리 사회에서 군대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나요?

전미선 ▪ 군대는 안보 면에서 필수적인 공적 기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단순한 공적 기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할 때, ‘국군 이병의 인권이 곧 대한민국의 인권이다.’, ‘훈련소 훈련병의 인권이 우리나라 인권의 수준을 보여 준다.’고 말하거든요. “야, 요즘 군대에서도 이렇게 안 해.”, “군대 밥도 이렇게는 안 나와.”라는 말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사회가 움직이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고, 규범과 기준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예산이 충분하다면, 저는 병사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운동화, 제일 좋은 체육복, 제일 좋은 패딩 점퍼를 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때는 군인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희는 200만 원이나 받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군 생활을 했던 제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한 달 내내 집에도 못 가고 계속 근무하면 그 정도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병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모두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죠. 다만, 군대에 와야만 하기 때문에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현실화했으면 합니다.

탄핵 이후, 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민주주의의 안정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입니다

OPQR_경제학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태웅 ▪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꼭 물어야 할 질문들에 대해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뭔가요?

이상민 ▪ 12.3 계엄 사태 이후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사실 계엄 선포에 동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봤어요. 개발독재 시절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성장이 둔화됐죠. 그 결과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에 불리한 요소가 아닌가?’, ‘국가의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려면 권위주의적인 권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박태웅 ▪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이상민 ▪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라는 생각인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줍니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

이상민 ▪ 우리나라의 민주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도 그때부터죠.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후진국에 머물러 있었는가 하면, 그것도 1987년까지입니다. 당시 전 세계의 1인당 GNP(국민총생산) 평균이 가봉의 1인당 GNP와 비슷했거든요.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세계 평균을 뛰어넘은 해가 1987년이었어요.

민주화가 실현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위로 올라선 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987년의 민주화 이후로 임금 투쟁 등이 일어나면서 임금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1인당 GNP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임금 상승이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벗어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후진국이었던 나라가 중진국이 되는 건 비교적 쉬운 일이에요. 어떤 나라든 조금만 노력하면 중진국 수준까지는 이를 수 있어요.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것이 문제죠.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이 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중진국의 함정에서 탈출한 시기를 확인하려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를 빠르게 좇아간 구간을 보면 됩니다. 그 시기가 IMF 이후예요. IMF 사태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죠. 정권이 바뀌었고, 관치금융이 사라졌고, 정경유착이 줄어들었어요. 민간경제 영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고 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죠.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민주화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끄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의 불경기, 과연 정치 상황과 무관할까?’

이상민 ▪ 하지만 요즘은 모두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죠. 그렇다면 ‘최근의 불경기는 정치 상황과 무관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언제부터 안 좋아졌을까요? 현재 세계 경제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는 미국이죠.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2년에는 어땠을까요?

박태웅 ▪ 그때는 우리나라의 사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지 않았나요?

이상민 ▪ 맞아요. 당시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았어요.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은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경제성장의 폭이 크게 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하락 폭은 별로 크지 않았거든요.

2023년부터가 문제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어요. 대표적 저성장 국가인 일본보다 낮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았던 적은 딱 네 번밖에 없었어요. 그게 언제인가 하면 유신 쿠데타가 일어난 1972년, 12.12 쿠데타가 일어난 1980년, IMF 사태가 터졌던 1998년, 그리고 2023년입니다.

박태웅 ▪ 2023년의 상황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누군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외환위기 때처럼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IMF 위기, 금융 위기, 코로나에 이은 2023년의 ‘정부 재정 위기’

이상민 ▪ 경제 위기가 생기면 그 원인을 나타내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1998년에는 ‘IMF 위기’, 2009년에는 ‘금융 위기’, 2020년에는 ‘코로나 위기’라는 용어를 썼죠. 그렇다면 2023년 경제 위기의 이름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정부 재정 위기’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재부는 지금까지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위기를 돌파해 왔거든요. 하지만 2023년은 예외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들어섰던 2022년에는 우리나라의 국세 수입이 396조 원이었거든요. 2024년의 국세 수입은 337조 원이었어요. 불과 2년 만에 15%가 줄어든 거죠.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극단적인 감소입니다. 세수가 이 정도로 줄어들면 일반적으로는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해 부채를 늘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일 텐데, 2023년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난 정부가 부채를 늘렸으니 우리 정부는 그러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저 위에 계신 분이 추경 편성을 막으려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행정부가 임의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덜어냈습니다.

박태웅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당연히 내려 줘야 할 예산을 빼앗은 셈이죠.

이상민 ▪ 국회에서 각 지자체의 교부세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통과시켰으면, 행정부는 그대로 교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산보다 덜 주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부예산안을 믿을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말끝마다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시잖아요. 자유시장주의자는 예측 가능성을 신봉해요. 정해진 예산을 갑자기 불용 처리해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행위가 아니죠.

감세를 주장하는 이상한 기재부

박태웅 ▪ 최근 몇 년 사이의 기재부 정책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상민 ▪ 기재부의 '부자 감세' 정책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왔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기재부는 감세를 주장하지 않는 부처였어요. 나라의 곳간지기 입장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감세를 얘기해도 웬만하면 반대했죠. 그런데 전대 기재부 장관은 국회에서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더 놀라운 점은, 추경호 당시 기재부 장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집단이 기재부였다는 거예요. 기재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를 보면 정부안에 따라 법인세율을 내렸을 경우 5년간 세수가 60조 원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재부 장관이 기재부 전체의 입장과 다른 말을 했던 거죠. 실제로는 기재부 장관의 말도 틀렸지만, 기재부의 말도 틀렸습니다.

박태웅 ▪ 펑크가 훨씬 크게 났죠.

이상민 ▪ 이번 정부의 감세 정책 후폭풍이 차기 정부에까지 이어지는 건 아닐까요?

박태웅 ▪ 그게 문제입니다. 한번 감세를 하면 다시 증세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상민 ▪ 박근혜 정부는 증세 정부였어요. 열심히 증세해서 세수를 늘렸죠. 4년 동안 늘어난 세수가 10조 원 정도 돼요. 박근혜 정부의 증세 효과를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이 누렸는데, 문재인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증세액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증세를 했고, 5년간 10조 원의 재정 여력을 활용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6조 8000억 원의 세수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국가 재정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은 사실이 아니죠.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들과는 달리 감세 정책을 폈잖아요. 그 영향을 차기 정부도 받게 돼요. 차기 정부 5년간의 세수 부족분은 약 100조 원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차기 정부의 기재부 장관은 마이너스 100조 원을 끌어안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거잖아요. 누가 장관직을 맡더라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 정부가 돈을 들이면 자살률은 분명히 낮아집니다."

이상민 ▪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들 중 최악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한때 노인 자살률이 급격하게 낮아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기초연금이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최초 도입 당시에는 지급액이 20만 원 정도였죠.

박태웅 ▪ 한 달에 20만 원이 지급된 것만으로도 노인 자살률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 있었던 거네요.

이상민 ▪ 돈을 들이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사실이 기초연금을 통해 증명됐죠.

박태웅 ▪ 예산을 쓰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왜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나요?

이상민 ▪ 돈이 없다는 게 이유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박태웅 ▪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안타깝네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바겐세일'!

이상민 ▪ 저는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미있는 얘기가 돈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의외로 돈 얘기를 잘 안 해요. 자기 돈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나랏돈은 거의 언급하지 않죠. 그런데 사실 나랏돈과 내 돈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강남 땅값이 오르는 현상을 정부 정책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주식 부자라면 그 사람도 관련 정책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예산을 공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이겁니다. '예산은 정치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다.'

박태웅 ▪ 예산 상황이 이렇게 험악해진 것은 우리가 정치투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이네요.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대가를 온 국민이 치르는 중인 거죠.

이상민 ▪ 세계적인 경제지 「포브스」가 12.3 계엄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점이 증명됐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라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이번 계엄에 대한 비용은 한국 국민 모두가 수십 년 동안 지불할 수밖에 없다.' 정치와 경제와 한 몸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정치발전을 이룬다면, 「포브스」의 분석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박태웅 ▪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바겐세일'이었다고 말하게 될 수도 있죠.

이상민 ▪ 네,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야죠.

학교 청소부들을 고소한 명문대생들,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직업의 귀천이 없는 세상 가능할까요?

OPQR_청소 노동자 문유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장

문유례 ▪ 우리 나이에는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청소하는 사람의 처지라는 건 한마디로 바닥이죠. 비정규직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이에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청소 노동자가 되기까지

질문자 ▪ 어떻게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문유례 ▪ 30살에 남편과 사별했어요. 당시 아들은 8살이라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고 딸은 5살이었어요. 그때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든 거죠. 서울 염창동에 있는 양복 회사에 들어가서 어깨와 소매를 연결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봉제 일 중에서는 가장 좋은 일이죠. 남자분들 양복 어깨랑 소매 연결이 A급 업무예요.

50살까지 일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감이 좀 떨어졌다고 할까요? 봉제는 그 '감'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집에서 1년쯤 쉬다가 2010년쯤부터 대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맡은 곳 중 하나가 연구실이었어요. 쥐를 키우는 곳에 저를 집어넣은 거예요.. 쥐들이 새끼를 낳아서 바글바글하더라고요. 3일 일하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저히 못 하겠다고요.. 얼마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쥐가 있는 연구실에는 가지 않게 해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문유례 ▪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학교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빨리 출근해서 일하면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오시기 전에 일을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방송국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는 하루 종일 청소해야 해요. 주말이나 명절에도 일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일하는 거죠. 학교의 청소 노동자들은 법정 휴일에 쉬고, 임시 공휴일에도 쉬어요.

질문자 ▪ 혹시 방학에도 쉬시나요?

문유례 ▪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 비정규직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까요?"

문유례 ▪ 저희는 새벽에 일하러 나와서 근무시간 중에 두 끼를 먹어요. 아침 8~9시에 아침을 먹고, 1~2시에 점심을 먹죠. 한 달 식대가 12만 원인데 한 끼에 2700원꼴이에요. 2700원으로 김밥 한 줄이라도 사 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밥 먹고 살자고요.

국공립대학 직원들의 한 달 식대는 14만 원이에요. 저희도 대학에서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에 맞춰서 2만 원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죠. 결국 이번에 인상이 됐어요.. 한 달에 14만 원이 식대로서 충분한 금액인가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그나마 개인 지출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 거죠.

투쟁 없이는 뭔가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남은 문제는 상여금이에요.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나면 2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최저임금 수준이죠. 국공립대학에서는 상여금이 1년에 두 번, 설과 추석에 나오거든요.. 총 55만 원을 받고 있어요.. 저희의 명절 상여금은 1년에 30만 원이에요.. 올해의 교섭을 통해서는 상여금 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맨날 데모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가 달리 어쩌겠어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요.

청소 노동자들이 시급 440원 인상, 폭염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쓸 수 있는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자 재학생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다.

문유례 ▪ 학생들이 고소를 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당시에 저희만 투쟁한 게 아니었거든요.. 규모가 컸어요..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얘기하고 그랬으니 시험공부하던 학생들이 화가 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을 미워할 순 없잖아요.. 학생들이 없으면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 없는 거니까요..

질문자 ▪ 그 이후에 업무 환경이 많이 개선됐나요?

문유례 ▪ 휴게실은 90% 이상 개선됐다고 봐요.. 냉장고, 에어컨이 다 설치돼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샤워실은 아직 애매해요..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학교 측에도 사정이 있을 테고, 차차 마련해 주시겠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질문자 ▪ 그 외에 또 불편하신 점이 있을까요?

문유례 ▪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요.. 중앙도서관, 독서실 이용을 못 해요..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학교 와이파이도 못 쓰고 있습니다.

질문자 ▪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내다 보면 굉장히 불편해질 만한 부분이네요.

문유례 ▪ 와이파이는 집에서야 아무렇지도 않게 쓰잖아요.. 그런데 일하러 나오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학생들한테 와이파이 좀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 학번을 넣어서 쓸 수 있게 해 줘요..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비정규직 중에서도 밑바닥, 청소 노동으로 향하는 고학력자들

문유례 ▪ 연세대 신촌 캠퍼스에만 청소 노동자가 300명 정도 있어요.. 송도 캠퍼스까지 합치면 550~6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엔 젊은 분들도 많이 오세요. 50대 초반에도 오시고 그래요. 고학력자들도 많아졌고요.

질문자 ▪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문유례 ▪ 이 나이가 되면 갈 곳이 없는 거죠. 여기가 마지막 코스예요. 이 일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거예요.

질문자 ▪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뭐가 있을까요?

문유례 ▪ 폐지 줍는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드렸으면 좋겠어요. 청소 일은 그래도 직업이잖아요. 폐지 주우러 다니는 분들은 사정이 더 어렵거든요. 나라에서 노령연금에 생활자금을 좀 보태서 한 달에 100만 원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겠어요. 그 정도 금액이면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따뜻한 밥 먹고, 아플 때는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나이 드니까 아픈 데 천지더라고요.

나보다 힘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어려운 일일까?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어디에 있나요?

OPQR_사회복지사 최지원
8년 차 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변인

최지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낸 통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150만 명이에요. 현장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의 수는 40~70만 명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자격증 소지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여덟 과목의 시험을 치러야 해요. 1년 정도는 준비해야 하거든요.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셨을 텐데, 다들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사회복지사 150만 명, 다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최지원 ▪ 사회복지사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직업입니다. 가정방문도 해야 하고, 상담도 해야 하고, 자원 연결까지 해야 해요. 때로는 말씀하기 어려워하시는 분이나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대변하는 역할도 맡죠. 몸이 두세 개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 관련한 토론에 대선 후보들이 나오면 다 보거든요. 다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일자리를 늘리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신 거예요.

구인 사이트를 보면 복지계에서만 구인 공고가 3차까지 올라와요. 3개월 동안 구인을 하고, 6개월 동안 공고를 '끌올'해요. 사람이 뽑히지 않는 거죠. 왜 사람들이 사회복지계로 오지 않는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왜 떠나가고 있는지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의 현실 1. 산재 신청은 불가능?

최지원 ▪ 사회복지사의 일터는 정신요양시설, 노인 관련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다양해요. 장애인 중에는 중증 발달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람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동료 선생님들이 장애인분들에게 맞는 모습을 종종 목격해요. 장애인분들이 도전적 행동을 하시면 일단 다급하게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몸 여기저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 보면 멍이 심하게 들어 있어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8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 때문에 공개적으로 병원에 가시는 경우를 한 번밖에 못 봤어요. 피가 나든, 살이 파이든, 멍이 들든 조용히 있다가 혼자 치료받는 거죠.

질문자 ▪ 개인적으로 처리하신다는 의미인가요?

최지원 ▪ 네. 기관 측에 얘기하면 심하게 다친 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책임 회피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에게 더 신경 쓰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산재 요청을 세 차례 정도 하니까 '이런 일이 너무 잦아지는 것 같다, 요청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분도 있었어요.

사회복지사의 현실 2. "휴가가 뭐죠?"

최지원 ▪ 저를 비롯한 제 동료분들 대부분이 겪는 일인데, 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해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서류상으로 휴가를 내고 기관에 그대로 나와서 근무를 해요. 그 정도로 일이 많아요. 어떤 사례도 있는가 하면, 만삭인 임산부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10시까지 야근을 하셨어요. 상사분들은 업무를 조정해 주시지는 않고 그 선생님을 볼 때마다 "빨리 집에 가."라고 한마디 던지시는 거예요. 집에 빨리 갈 수가 없죠. 내일 당장 결재를 받아야 하고, 일이 마무리되어 있지 않으면 지적받을 텐데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퇴근하실 때 지문을 찍지 않으셨어요. 그 광경을 기관장님이 목격하신 적도 있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사회복지사의 현실 3. 강요된 만능 엔터테이너

최지원 ▪ 복지시설에서 장기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앞에서 하는 거죠. 주로 신입 직원들이 나서게 돼요. 본인의 의사로 하는 일이라면 즐거울 거예요. 가령 제가 춤을 잘 춰서 무대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문제 될 것이 없죠. 하지만 그 장기자랑이 조직문화의 일부라,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한 200명 정도의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중 3분의 1 정도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시설 이용자들을 즐겁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너희 업무 중 하나인데, 하기 싫으면 나가라.', '아주 못된 것들이네.'

사회복지사의 현실 4.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

최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요. 보통은 4급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하는데, 가이드라인상 4급의 월급은 220만 원이에요. 국가보훈처에서 일하는 어느 선생님은 197만 원을 받고 계신다고 해서 놀란 적이 있어요. 국고지원금을 받는 시설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 시설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근로자가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을 만한 임금을 뜻하는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서울시의 2025년 생활임금은 246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4급 사회복지사는 생활임금보다 26만 원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생활임금에는 강제성이 없죠. 권고 사항이 실현되는 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의무화를 해 주셔야 저희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어요.

질문자 ▪ 복지의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지원 ▪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겪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이런 처우는 당연한 거구나.'. '그냥 버티자. 어차피 어제도 힘들었고 내일도 힘들 텐데.' 하고 단념하게 되죠.

사회복지사의 현실 5. 가족 같은 시설?

최지원 ▪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지기관이 전체의 1~2% 정도예요. 나머지 시설의 운영은 지자체에 이양하죠. 국가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기관이 사유화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들었던 사례 중 하나는 기관을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였어요. 기관장, 부장, 팀장이 모두 한 가족인 거죠. 그 가족 중심으로 시설이 돌아가니 다른 직원들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해도, 윗선에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주말에 연락해서 개인 일정이 있으니 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아주 흔해요. 집에 있는 조명 전구를 갈아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한 선생님이 그리로 가신 경우는 제가 직접 봤고요. 자녀, 조카의 봉사 시간이 부족하니 봉사활동 확인서를 써 달라는 요청은 굉장히 만연해요. '직장갑질119'라는 공익단체에서 갑질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받았는데,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행복이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유튜브 예능에 대학교 사회복지과가 나와서 재미있게 봤어요.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을 벌써부터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뻤어요. 먼저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같이 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기로 오면 안 된다고 말리고 싶어지기도 했어요.

현장이 달라진다면 그런 마음이 사라질 수 있겠죠. 정확한 법령과 지침을 마련해서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바꾸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요.

사회복지사는 힘든 점이 많은 직업이지만 좋은 점도 많아요. 시설 이용자분들이 "선생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실 때마다 마음에 쌓이는 뿌듯함,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지면 시설 이용자분들에게 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곧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일터에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같이 힘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 각계각층이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인식을 넘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에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선수는 금메달만 따면 되나요?

OPQR_전직 하키 선수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 전 필드하키 선수

함은주 ▪ 제가 어렸을 때 '88 꿈나무'를 양성하는 사업이 진행됐어요. 전국의 학생들 중에서 88 올림픽 선수로 성장할 만한 학생을 뽑으려고 했던 거죠. 육상은 '기초 육성 종목'이어서 초등학교에는 으레 육상부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반에서 키가 좀 큰 아이들을 뽑아 갔죠. 그럼 그날부터 그 아이는 육상부원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육상을 시작했어요.

중학교에 진학해 보니 하키부가 있더라고요. 담당하시는 분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보시고는 '너는 하키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당시에는 하키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훈련, 기숙사 방 청소, 화장실과 샤워실 청소를 끝내고 나면 강의는 이미 시작된 뒤

함은주 ▪ 기왕 시작했으니 잘하고 싶었어요. 3학년 때는 주전이 됐고,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면서 대학까지 가게 됐죠. 저는 운동을 하면서도 학교 수업을 듣고 싶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다른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선수 생활을 1년 해 보니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1학년들은 새벽 훈련을 마치고 와서 기숙사 방을 청소한 뒤에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 청소까지 도맡아야 했거든요. 청소를 끝내고 나면 이미 수업이 시작된 뒤라 강의를 듣는 건 포기해야 했어요. 강의를 듣지 못했으니 과제가 뭔지도 몰랐죠. 친구들한테 물어물어 간신히 과제를 해내면, 선배들이 과제를 대신 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느 순간 회의가 들더라고요. 대학에 와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졸업하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선배들을 보면 학교를 졸업한 뒤 실업팀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두 명뿐이었어요. 교사가 되거나 체육과 관련한 일을 할 생각이 없다면 여기에 더 머물러 봐야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해 온 운동을 어렵게 그만뒀습니다.

'운동할 시간도 부족한데 왜 자꾸 수업을 들으라고 해?'

함은주 ▪ 작년 말에 인천에 있는 학교 축구부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운동선수들이 대회나 훈련 때문에 결석하면, 출결 사항을 조작해서 운동부에 특혜를 줬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보도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운동 성적이고 나머지는 모두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선수들에게 수업을 들으라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불만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운동할 시간도 부족한데 왜 자꾸 수업을 들으라고 해? 운동만 잘하면 모든 게 해결돼.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따 봐.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대한체육회장도 될 수 있고, 문체부 차관도 될 수 있어.' 이런 인식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대다수 학생 선수의 미래

함은주 ▪ 그렇게 운동만 하는 선수들 중 성공하는 선수는 얼마나 될까요? 전체 국민 중 '체육인'으로 불리는 전문 선수는 0.1%도 안 되는데, 그중에서 프로 팀에 입단하거나 국가대표가 되는 선수들은 정말이지 0.001%도 안 돼요. 심지어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라 해도 계약 해지를 당하거나 팀에서 방출될 수 있어요. 선수 생활이 가능한 시기는 보통 길지 않으니까 젊은 나이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부터는 운동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교육자나 감독으로서 운동 관련 경력을 이어 가는 사람들은 극소수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죠. 계속 운동만 했는데, 다른 일을 무슨 수로 찾을까요?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었을 텐데, 그럴 권리를 박탈당한 거예요. 학생 선수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결과 학교체육진흥법이 생겨났고 '최저학력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최저학력제, 학교생활이 삶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믿음

함은주 ▪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성적을 받지 못하면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에서 규정하는 최저 학력에 해당하는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기본적인 학교생활만 하면 거의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학교생활이 한 사람의 삶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믿음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체육계에서는 '학생 선수들의 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해요. 최저학력제가 운동에만 몰두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죠. 결국 작년 말에 이 제도의 시행이 유예됐어요. 2024년 기준으로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선수의 비율이 전체의 5% 정도였거든요. 5%의 학생들 때문에 최저학력제를 없애야 할까요?

현재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운동선수 출신 국회의원분들이 정당별로 한 분씩 계십니다. 모두 국가대표 출신이세요. 문광부 차관, 대한체육회 회장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이분들이 학생 선수들의 삶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검토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만, 엘리트 체육인이셨던 만큼 운동에 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 크게 공감하실 것 같기도 해요.

질문자 ▪ 체육계에서 안타까운 폭력 사건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함은주 ▪ 선수들은 운동만 계속해 와서 불이익을 받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해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은 체육계의 많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요. 선수들이 부당함을 인식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피해자를 따돌리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괴롭혀서 체육계를 떠나게 만들어요. 시쳇말로 '묻어 버리는' 거죠. 항의를 하려면 운동을 그만둘 각오로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도 최저학력제와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학교생활을 경험한다면 자신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하고, 조금이나마 더 명확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함은주 ▪ 지난 정부부터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자주 내걸었어요. 모든 사람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스포츠를 하며 스포츠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나라가 스포츠 선진국이라는 거죠.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대회가 열리면 '어느 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는 영화감독이라더라,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의사라더라' 하는 얘기가 해외 토픽 기사에 실리잖아요. 마냥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과 환경이 있었기에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알아보고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밟지 못하고 있어요.

다수의 체육인 지원 프로그램이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요. 현재의 우리나라가 국가대표 정도는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라면,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가 될 뿐이에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잘사니즘'이라는 용어를 내놓았잖아요.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유 시간에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면 만족스러운 생활이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엘리트 운동선수를 '체육인'이라고 부르지만, 일상에서 스포츠활동을 즐기고 스포츠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체육인인 셈이거든요. 체육인이라면 당연히 스포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요.

엘리트 선수들이 수많은 체육인들과의 소통 없이 체육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한국 사회가 되려면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모두 함께 시작입니다.

OPQR_행정학자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박태웅 ▪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셨어요?

최영준 ▪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는 왜 지난 20년 동안 OECD 중 꼴찌였을까?'라는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박태웅 ▪ 정말 속상한 질문이에요. 꼴찌를 기록한 주요 지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영준 ▪ 노인빈곤율, 자살률, 성별 임금 격차, 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가 금메달 2개를 더 땄어요. 2020년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울증 발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최근의 갤럽 조사에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OECD 사회지표 관련 그래프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맨 오른쪽이나 맨 왼쪽을 보면 되거든요.

박태웅 ▪ 가져와 주신 질문은 '우리는 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국민인데도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경제지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가?'라고 바꾸어 볼 수도 있겠네요.

최영준 ▪ 맞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기뻐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일본이 꺾인 겁니다. 성장을 우선시하다가 거위의 배를 갈라서 금을 미리 꺼내 썼기 때문에 꺾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거위가 황금 알을 꾸준히 낳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못하고 황금을 하나라도 더 빨리 확보하려고 배를 가른 거죠. 그러면 거위는 죽지 않습니까? 미래에는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국가를 신뢰하지 않아서 "난 여전히 불행하니까 세금 안 낼 거야."라고 말하는 사이에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면 정부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되죠. 지난 20년 동안 일본 사회의 상황이 그랬거든요.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000년대에 들어서 100%를 넘어섰고, 이제는 250%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출산 이면의 긍정적인 의미

박태웅 ▪ 우리나라에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까요?

최영준 ▪ 저는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평등과 출산율 사이의 관계를 보면, 성평등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회의

출산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성평등이 진행될수록 출산율이 확 떨어지죠. 여성들은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나는 집단의 부품이 아니라 중요한 개인'이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미비하면 아이의 숫자는 줄어들죠. 그러다가 사회의 성평등의식 수준이 올라가고 제도가 하나하나 바뀌면서, 여성들이 출산해도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출산율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평등의식 수준에 따른 출산율 그래프는 'U'자 형 패턴을 보이죠. 우리나라의 그래프는 아직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난 20~30년이 우리에게 나쁘기만 한 시기였는지 묻는다면, 저는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개인들이 출산 등의 활동을 멈추고 자기의 의미를 찾아 가는 시간이었다고요.

사람들은 정부가 저출산정책을 펴느라 헛돈을 쓰고 있다고 말해요. 돈을 많이 들인 데 비해 별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파여 있는 구덩이를 메꾸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정책 중에는 오늘 씨앗을 심어야 50년 뒤에 꽃을 피우는 것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질문자 ▪ 우리가 북유럽 국가들을 보통 '복지국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영준 ▪ '빈곤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가 존재하는가?',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 지출을 하는가?', '사회보장 제도를 갖추고 있는가?'라는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있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출 규모가 GDP의 15% 수준으로 올라왔고, 4대 보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노동자는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좋은 복지국가란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인데, 우리나라의 돈을 쥐고 있는 정부 부처들은 문제가 커지고 난 뒤에야 돈을 조금씩 풀기 시작해요. 불이 나기 시작했을 때 대응하지 못하고 산불 정도로 번져야 조금씩 끄기 시작하는 셈이죠. '출산율이 이렇게 심각했어?', '자살률이 이렇게 심각했나?' 하고 양동이에 물을 채워서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정도 양의 물을 아무리 부어도 산불을 끌 수는 없거든요.

최근 들어 일본, 남유럽 국가들의 복지 지출액이 북유럽 국가들만큼 올라갔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노인분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의 규모가 점점 커진 거예요. 북유럽은 조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화에 대응해 왔고, 부의 재분배가 잘 일어나는 편이어서 복지 지출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위험의 불씨가 살짝 보였을 때 잘 끄면 산불로 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산불은 끄지 않고 "불은 좀 났지만 살다 보면 꺼질 거예요."라고 말하는 나라

박태웅 ▪ 지금 우리나라는 사방에 산불이 나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최영준 ▪ 산불이 활활 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산에서는 못 살겠다'라고 생각한 끝에 떠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저출산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먼저 물었어야 하는 질문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데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는 없죠. 불이 난 산에서 급히 내려오려는 사람에게 "불은 좀 났지만 살다 보면 꺼질 거예요."라고 말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태웅 ▪ 사실 저는 정부에서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다룬 리포트가 나오는 걸 본 기억이 없어요. 진작 했어야 할 질문들을 던지지 않았던 것 같네요.

최영준 ▪ 아이 돌봄 정책만 놓고 보면 거의 북유럽 수준입니다. 돌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 책임진다는 표현까지 써요. 그러면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국가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든 보수 진영에서든 나라가 아이를 돌보겠다는 얘기만 해요. 부모는 나가서 돈을 벌라는 거죠. 저도 아이 셋을 키우는데, 정치권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아이의 손을 잡고서 집에 오고 싶어요. 어린이집에서 밤 10시까지 아이를 돌봐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린이집에 늦게 가면 다른 아이들은 다 집에 가고 우리 아이가 혼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나라가 돌봄을 책임져 줘야 하는 게 아니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더라도 생산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고용주와 노동자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 봐야 합니다.

'퇴근 후 아이들과 긴 시간을 보내고 개인적인 삶을 이어 나가는 가운데 자유로워진 정신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어떻게 하면 경제 부문으로 가져와서 생산력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야 해요.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질문은 그다음에 해야 하는 거죠.

분배와 성장, 함께 갈 수 있을까?

박태웅 ▪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하면서도 경제성장과 혁신을 이룰 수는 없는 걸까요?

최영준 ▪ 복지 지출을 조금만 늘리려고 하면 '나라 재정이 무너진다', '국가부채가 급증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30~40년 동안 언론과 정치권이 그 말을 똑같이 반복해 왔어요. 그 말이 맞다면, 복지국가들의 국가부채 비율은 굉장히 높을 것이고 복지 분야에 지출하지 않는 국가들의 국가부채 비율은 아주 낮겠죠. 하지만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의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낮아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지출을 늘리면 나라가 망한다고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 지출을 적게 하는 국가들이 부채 비율이 왜 높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국가의 국민들은 국가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여기거든요. 그러니 국가가 세금을 걷으려고 할 때 잘 내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반면 복지 지출을 많이 하는 나라의 국민은 국가를 신뢰합니다. 연금보험료만 내면 노후가 보장되고, 건강보험료를 내면 중병에 걸려도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실비보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사교육도 필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생활을 사회가 보장해 줄 테니까요. 이런 국가의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겠지만, 그들의 가처분소득은 우리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박태웅 ▪ 제가 재미있게 본 자료가 있는데, 북유럽 사람들의 조세 만족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효능감이 있는 거예요. 세금을 내면 더 많이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부가 돈을 더 써야 한다면 우리가 세금을 낼 테니까, 우리의 문제를 계속 잘 해결해 줘.'

최영준 ▪ 제가 예전에 '국제사회조사'(사회과학 연구에 유용한 주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조사 프로그램) 데이터를 분석해 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 일본, 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답변의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돈을 더 써야 한다면 우리가 낼 테니까 우리의 문제를 계속 잘 해결해 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자료들을 보면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유럽위원회에서 해마다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유럽 국가들과 이들의 경쟁국가들이 경제 혁신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알아본 결과를 정리한 거예요. 혁신 순위를 보면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태웅 ▪ 북유럽 국가들의 청년들이 창업에 적극적인 이유를 궁금해하니까, 그 나라 청년들이 저한테 되물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직장을 선호해야 할 이유가 뭐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최영준 ▪ 그런 사회의 구성원은 삶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박태웅 ▪ 아래쪽에 그물망이 있다면 외줄을 탈 수도 있는 거죠. 떨어져도 죽지 않으니까요. 북유럽 청년들은 창업하는 이유로 '플랫 하이어라키(flat hierarchy)'를 들기도 했어요. '평등한 관계'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최영준 ▪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과 대화해 보면, 학생들이 큰 괴리를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는 부모님과 굉장히 평등한 관계를 맺어 오다가 직장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하면 갑자기 너무 큰 하이어라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해요.

모 대기업에서 외국의 혁신적인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데려오길래 '데려와 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관료적인 조직에서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다른 기업이 혁신할 수 없게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계속 데려오겠다'고 대답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혁신이 자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게 하려면 삶의 불확실성을 국가가 줄여 줘야 해요.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복지국가가 충분히 성장과 혁신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분배냐 성장이냐를 놓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복지국가로 향하는 길의 걸림돌, 정치권에 대한 낮은 신뢰도

질문자 ▪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세금을 내면서 '내 돈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최영준 ▪ 복지국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복지 혜택을 받아 보면 복지 제도를 지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받아 보신 어르신들은 그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노년층 사이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는 정치에 대한 신뢰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정치권에서 자꾸 싸우는 바람에 표류하는 걸 지켜보고 있으면, 내 세금도 저 싸움 속에서 헛되게 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안정, 정책의 안정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지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박태웅 ▪ 사회 후생 지표가 좋지 않으면 결국 경제에도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래에 청구서를 던지는 일은 이제 그만두고, 지금부터라도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돈을 쓰자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겠네요.

최영준 ▪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국민의 행복과 관련한 정책의 성과는 오랫동안 지난하게 노력해야 겨우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발전시켜 온 복지 제도와 사회정책들이 헛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국민들이 그런 변화가 바람직하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눈에 잘 띄는 변화가 필요해요.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누적된다면 가끔 불이 나더라도 얼른 불을 끄고 이 산에 계속 살겠다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으면서 가꾸겠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질문Q레이터

‘질문Q레이터’에서 국회의원 19인은 단순히 응답자가 아닙니다.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작품을 선별하고 전시하듯, 국회의원은 시민이 던진 질문을 국회 안으로 들여와 논의의 장에 올리고,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각자의 소속 상임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이나 입법 현황을 설명하고, 시민의 우려와 아이디어에 공감하며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유튜브와 지역 활동을 통해 녹서의 취지를 확산하고, 시민 참여형 정치를 실현하고자 힘썼습니다. 인터뷰 후반부에는 국회의원들이 반대로 자신이 던지고 싶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한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 법과 제도의 공백, 시민과 정치의 거리감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의 방향도 함께 제시합니다.

이 인터뷰들은 정치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품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민의 질문에 응답해 나갈지를 엿볼 수 있는 창입니다.정치는 답이 아니라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국회의원 19인의 질문’은 질문과 국회의 연결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이기도 합니다.

질문Q레이터 인터뷰 목차

1	대통령실을 용산에 계속 두어도 되나요?	모경종 국회의원
2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떻게 완성될 수 있을까?	김영환 국회의원
3	역사 논쟁을 교육에서 더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	김준혁 국회의원
4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행복해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황정아 국회의원
5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훈기 국회의원
6	대한민국 외교 선진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성락 국회의원
7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 집행자가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국민은 지켜보기만 해야 할까요?	이성윤 국회의원
8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해야 군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을까요?	박선원 국회의원
9	우리 사회의 분열을 어떻게 치유하고 통합할 것인가?	채현일 국회의원
10	양극화 해소 없이 경제적 안정,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가?	김남근 국회의원
11	예술과 체육, 그리고 창작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가?	이기헌 국회의원
12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 안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윤준병 국회의원
13	산업 분권화와 균형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허성무 국회의원
14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박지혜 국회의원
15	무정부적 의료 공급 체계,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않을까요?	김 윤 국회의원
16	아이들은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저출생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남희 국회의원
17	전환기의 노동시장, 새로운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용우 국회의원
18	2025년의 우리 사회에서 누가 가장 불행할까요?	전진숙 국회의원
19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손명수 국회의원

대통령실을 용산에 계속 두어도 되나요?

모경종 질문Q레이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천 서구 병)

1. 질문의 맥락

용산 대통령실은 왜 문제인가요?

❶ 용산 대통령실의 안보 취약성과 입지적 불안정성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시작에 맞춰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며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한곳에 모여 있는 구조인데, 국가안보의 취약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국방부가 기존 청사를 비우는 과정에서 서버 등 시스템 공백이 불가피해지는데, 적의 해킹 위협으로 인한 보안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 특히 인근 고층 건물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국방부와 대통령 집무실이 서로 가까웠던 것이 계엄 모의에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❷ 법적·제도적 미비점

- 2024년 9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감사 보고서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직권남용과 부패, 불법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업체가 대통령실 관저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 주요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서실, 행안부의 공사 발주, 공사 참여 업체 자격 검증 및 하도급 관리 등 과정에서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된다.", "관저 보수 공사의 경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계획 등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예산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고 관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주계약 업체와 하도급 업체 등이 시공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하거나, 비서실에서 자격 없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 참여 등에 대한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 "실제 공사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을 시공·설계업체로부터 제출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준공 도면대로 실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실시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
-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무리하게 공약을 이행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2. 해결 방안

❶ 대통령실 재이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할 대통령실 위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대통령실의 위치를 명시한 법령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실을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는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해야 하고, 이 경우 개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만일 대통령실이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완수와 더불어, 차세대 행정 체제 개편 논의가 촉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대통령실 위치를 서울에 국한하지 않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❷ 대통령실 재이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 만일 청와대로의 재이전을 검토한다면, 청와대의 관리·활용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현재 청와대의 관리·활용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비영리재단법인인 청와대재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시키기 위해 청와대 개방을 중지할 경우, 현재 청와대재단에 위탁되어 있는 권한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청와대재단의 이익이나 신뢰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경과 기간을 두거나 대체 업무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❸ 대통령실 재이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합니다

- 대통령실 이전에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 결과, 2024년 11월까지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집행된 예산은 832억 1600만 원입니다. 이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예산에 더해 연쇄 이동을 해야 했던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이 사용한 예산을 합친 금액입니다.
- 대통령실을 다시 이전한다면, 현재까지 대통령실 이전에 소요된 매몰비용과 대통령실 재이전에 소요될 비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대통령실 이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대통령실 이전의 정당성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떻게 완성될 수 있을까?

김영환 질문Q레이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 정)

1. 질문의 맥락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나요?

❶ 권력의 집중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대한민국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권력과 자본의 양극화 속에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 모두 위기를 맞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 정부 이후 권력의 집중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권력과 자본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붙어 있어서 권력에 대한 정치개혁만으로 국민들에게 삶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초를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 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가 필요하지만, '과연 국민들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국가 시스템은 이러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❷ 정치적 민주주의의 훼손: 권력의 집중

-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들이 나누어 갖는 구조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검찰 권력은 강화되고 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은 약화되고 있고, 대통령제의 한계와 문제점이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 자산 양극화, 노동 소득의 감소, 교육 및 일자리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부를 획득하고 축적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이 계층 간 격차를 더욱 벌려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 소득 수준에 따른 혼인율과 출산율 격차가 심해지면서 계층 간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불평등과 양극화가 계층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❶ 권력의 민주화

대통령, 사법부, 검찰에 대한 개혁이 시급합니다.

- 위임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국민이 보다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과,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을 다른 기구에 분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고,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법개혁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강력한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검찰개혁 역시 필요합니다.

❷ 경제의 민주화

-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합니다.
-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가 된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에 대한 과세 없이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산 자체에 대한 과세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조세정책이 없다면 양극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 교육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더라도 기회의 평등을 통해서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존재해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의 경제정책이 재벌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수립되고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제 권력 역시 분산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해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강남 중심의 경제 집중이 심화되면서 서울 내의 지역 간 불균형, 그리고 서울과 지방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강남으로의 자본집중 문제를 해소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 자산 축적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 논쟁을 교육에서 더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

김준혁 질문Q레이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 정)

1. 질문의 맥락

윤석열 정부 뉴라이트 논란과 탄핵 정국

❶ '뉴라이트' 인사의 역사 기관장 임명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주요 역사 연구 기관장에 과거 역사 왜곡 및 친일 인사 옹호 논란이 일어났던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과거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들 중 일부가 억울하게 매도되었다는 친일파 옹호 발언을 반복하여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 그리고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에 관여한 인물로, 이번 임명으로 역사교육 및 연구 편향성이 우려됩니다.
-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경제학자로서 일제의 경제 수탈을 부정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인물로 역사 연구의 객관성 훼손이 우려됩니다.
-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한 인터뷰에서 '2023년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는 발언으로 국민 비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❷ '12.3 내란' 및 '대통령 탄핵' 등 역사적 사건 발생

-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모의, 이에 따른 대통령 탄핵 소추와 권한대행 체제, 서부 지방법원 공격,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등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일련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 윤석열 탄핵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흔들 만큼 극심하게 표출되었으며, 이에 탄핵 이후의 사회적 회복과 성찰 노력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2. 해결 방안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❶ 역사 왜곡과 편향된 해석 방지

역사교육을 강화하면 학생들이 다양한 사료와 관점으로 역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적·이념적 관점(예: 뉴라이트, 반공)에 따른 편향적 역사관이 교실 내에서 무비판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왜곡된 역사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❷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 양성

올바른 역사교육은 시민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뉴라이트 논란처럼 역사적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역사교육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적 가치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판단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강남 중심의 경제 집중이 심화되면서 서울 내의 지역 간 불균형, 그리고 서울과 지방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강남으로의 자본집중 문제를 해소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 자산 축적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❸ 사회 통합과 갈등 예방

독일 사회에서는 서독 · 동독 통일 이후 적극적인 혐오 · 차별 금지와 미디어 교육 등으로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완화했습니다.

- 다각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함양한다면, 역사 해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공동체의 화합과 통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❹ 헌법 및 역사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계기 교육', '시민교육' 차원에서 시청하는 문제가 교육계에서 화두가 되었습니다.

- 탄핵 선고를 통해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내란 시도, 제왕적 대통령제, 불법 계엄, 헌법재판소의 역할, 개헌 등 다양한 주제로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언론 및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의 소비와 재생산, 과몰입, 혐오 예방 등을 주제로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행복해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황정아 질문Q레이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전 유성 을)

1. 질문의 맥락

정부는 왜 대한민국 과학기술 생태계를 파괴하나요?

❶ 과학기술 생태계 회복이 최우선 과제

전례 없었던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생태계가 파괴된 상태이며, 머지않은 미래에 큰 손실에 직면할 위기 상황입니다.

- 과학기술계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파탄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았으며, 현 정부의 과학기술자에 대한 홀대가 매우 심각합니다.
- 2023년에 발생했던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2023년과 2024년에 많은 현장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계속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거나,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다른 연구로 옮겨 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 과학기술인들이 심각한 정도의 자괴감에 빠져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상실될 위기입니다.

❷ 과학기술 연구자의 현장 이탈은 해당 연구 영역 자체의 소멸로 귀결

자신의 독자적인 영역에서 경력을 이어 오던 현장의 많은 연구자들이 떠나면서 해당 연구 영역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과학기술 연구는 국가 과제로 사업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조달하는 체계이고, 1~3년간의 단기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교수, 대학원생, 비정규직 연구자 등이 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 예산의 일괄 삭감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그간 참여했던 연구자들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기에, 결국 연구 인력이 떠나는 상황입니다.
- 연구자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연구자가 사라지면 그 연구 분야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연구자를 다시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 경력이 있는 유망한 과학자들과 수많은 인재들이 해외로 떠났고,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와 희망을 보고 꿈을 키워 왔던 학생들이 이공계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고 전공을 바꾸는 실정입니다.
- 이공계 대학 학부생들이 반수 휴학을 하고 의대에 가는 현상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고등학생 및 중학생들 사이에서 과학기술 전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❸ 2025년도 과학기술계 R&D 예산의 잘못된 복원

정부는 예산 규모만 회복시켰을 뿐, 당초 진행되었던 연구가 아닌 아무도 원치 않는 분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 분야가 아닌 공무원들이 원하는 분야의 예산 편성은 올바른 복원이 아닙니다.
- 어떤 연구를 할지, 그 연구를 누가 할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과학기술 생태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2. 해결 방안

과학기술에 대한 노력의 정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❶ 과학기술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

국가 예산 총 지출의 5%를 과학기술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 국제 협력 과제의 경우,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계산하고,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연구 분야·연구 시점·연구 기간·협력 국가·연구비 규모 등에 대한 재설계를 해야 합니다.

❷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필요

AI, 에너지, 바이오, 기후, 우주 항공, 반도체, 전기차, 뇌과학 등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모두 과학기술의 영역이므로 좀 더 상위 레벨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 중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로드맵을 완성하고, 상위 레벨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 과학기술의 경우 한 번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범정부 차원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현재와 같은 불황의 시대를 타개할 유일한 해결책으로 전 세계가 과학기술을 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❸ 다양한 연구과제 선정과 장기간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연구과제로 선정되기는 어렵게 하고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는 흐지부지한 현행 체계를, 다양한 연구과제 선정이 용이하되 평가를 제대로 하는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구 현장의 나태, 기강 해이, 방만 경영 등은 평가나 감사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으므로, 연구과제 선정의 문턱을 낮추어 다양한 연구과제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자를 신뢰해야 하고, 필요시 오랫동안 연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훈기 질문Q레이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천 남동구 을)

1. 질문의 맥락

공영방송이 정권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특정 정권에 유리한 보도를 하도록 강요받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는데,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❶ 공영방송 공공성 유지를 위한 구조적 과제

공영방송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이용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영방송을 통제하거나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 현행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을 관장하는 이사회 구성권은 실질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권의 절대적 영향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와 공영방송 경영진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자신의 임명권자라 생각하고, 임명권자에게 충성하는 '정치적 후견 주의'가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 특히 KBS와 MBC 등 주요 공영방송이 정치적 개입에 직면하면서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논의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❷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 필요

-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부상하면서 공영방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극단적인 정보 확산 속에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해결 방안

❶ 방송법 개정 추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❷ 정치적 후견 주의 타파

정권 입맛에 따라 공영방송이 통제되거나 장악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 현행 제도하에서는 공영방송의 경영진만 장악하면 방송 내용에 개입할 수 있었으나, 편성 위원회 설치 및 편성 규약 준수 의무화, 임면 동의제 법제화 등을 통해 방송의 독립 및 공정 방송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❸ 뉴미디어 시대 속 공영방송의 역할

유튜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영방송이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문체부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정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합니다.

❹ 여론과 시민사회의 역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영방송 의사결정 구조에 시민 대표를 포함하는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고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 선진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성락 질문Q레이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1. 질문의 맥락

우리나라는 분단된 나라로 북한의 핵 문제를 안고 있고, 4강에 둘러싸여 있어 지정학적으로 유례없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외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외교는 선진적이지 못한가요?

❶ 우리나라 외교의 고질적 문제

국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교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내재적 약점이 극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자기 중심적·감정적 관점으로 대외 문제를 보는 성향이 사회 전반에 만연합니다.
- 대외 문제를 손쉽게 국내 정치의 종속 변수로 다루는 관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외교 문제를 지나치게 이념성과 당파성으로 다뤄 국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대중적 지지에 경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을 따라 들어오는 권력 엘리트가 비전문적 위치에서 외교를 좌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❷ 우리나라 외교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외교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복합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 최근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이 불가피하게 유발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발 반작용에 대처할 방안을 내놓지 못해 최악의 한중 관계, 최악의 한러 관계를 맞았습니다.
- 심화되는 미중 대립,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악화일로에 있는 미러 관계와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 · 평화 문제에 더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졌습니다.
- 남북은 강 대 강 대치로 고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은 역내 대립 구도를 활용해 핵·미사일 능력을 더욱더 고도화하고 러시아, 중국과 연대를 강화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 합니다.

2. 해결 방안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위한 한국형 외교 좌표가 필요합니다

❶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통합되고 조율된 전략 수립 필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진전시킴과 동시에 북·중·러 관계를 관리하고 그에 대처할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 미·일·중·러에 대해 통합되고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핵심 외교 안보 어젠다인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통일 추구를 위해 중국, 러시아와 완전히 등지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 유럽, 아세안, 인도, 중남미 등에 대해서도 국익을 증대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헤징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❷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 협상 복원 필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억지력 강화는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대화와 협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억지와 협상은 적절히 배합되어야 합니다.

- 중러와 등지고, 중러를 북한 쪽으로 모는 결과를 초래할 외교는 지양해야 합니다.
- 미중, 미러가 대립하더라도 사안별로 협력 가능한 영역을 분리해 내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예컨대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 정착이 협력 영역에 자리매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미북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여 우리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❸ 정파성, 이념성, 국내 정치 종속성 완화 필요

국익 중심 초당적 외교를 위한 정치권의 인식 제고와 외교 개혁이라는 시대적 어젠다 설정이 필요합니다.

- 외교정책 집행을 맡고 있는 정부부터 일방적 행태를 지양하고, 국민 및 국회와 소통하는 외교를 해야 해야 합니다.
- 국격에 맞는 선진 외교 기반 구축을 위해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능력과 자질이 미흡한 인사가 고위직 외교관 직위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도 병행돼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 집행자가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국민은 지켜보기만 해야 할까요?

이성윤 질문Q레이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 을)

1. 질문의 맥락

주권자인 국민이 만든 법을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악용하는 상황에서, 국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❶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검찰은 정치권력과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권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택적 정의'를 구현해 왔습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추진하자, 정치검사들은 집단이기주의로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정부에 대해 정치적 수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살아 있는 권력 수사(살권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가진 권한을 이용한 연성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스스로 권력이 된 검찰은 윤석열·김건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로 덮었습니다. 반면,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사냥하듯 수사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사·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❷ 국민이 통제할 수 없는 법 집행

법은 주권자인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법 집행 역시 국민의 법 상식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현재의 제도로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 집행자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점을 노려 법 기술을 부려도 국민이 이를 알아채거나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법 기술을 부려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 주고, 김건희의 의혹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정적 제거를 위해는 표적 수사, 협박·회유를 통한 사건 조작, 억지 기소도 했습니다. 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법 집행자들이 국민 법 상식과 맞지 않는 법 기술을 부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 해결 방안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❶ '12.3 윤석열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개헌

1987년 개헌(87년 체제)의 핵심은 군사독재를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여 정치적 판단의 최종 권한을 사법부에게 맡기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40년이 흐른 지금, 87년 체제 헌법은 국민의 변화된 주권 행사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치권이 사법부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사법부 역시 점차 정치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왔고, 이는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법기관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권은 과도하게 커진 사법 권력을 악용하였고, 12.3 내란을 일으켜 내란 세력들을 비호하는 데에 그 권력을 사용하였습니다. 내란을 속히 종식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된 검찰 영장 청구 독점 조항을 빼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 사법기관 중심적인 체계를 고쳐야 합니다.
- 현재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방 소멸, 기후 위기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헌법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국민 중심 개헌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❷ 국민이 직접 뽑은 '봉사자', 국민이 해임도 직접 할 수 있어야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주권자 국민이 선택한 '머슴'입니다. 이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윤석열 파면 선고까지 123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을 국민이 아닌 헌법재판관 9명에게 맡기는 구조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탄핵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므로 최종 결정 역시 국민이 해야 합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 중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정 활동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서 국회의원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❸ 검찰 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 검찰은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기존 검찰은 폐지되어야 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수행할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이름만 바뀐 제2의 검찰이 되지 않도록 두 조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검찰 편의주의에 따라 왜곡된 형사 사법 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 인권 보호가 중심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기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막아야 합니다.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해야 군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을까요?

박선원 질문Q레이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천 부평구 을)

1. 질문의 맥락

위기의 대한민국 군대, 초급간부들이 군을 떠나고 있습니다.

❶ 초급간부 이탈, 군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3년, 경력 5년 이상의 장교와 부사관 약 9000명이 전역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 수준이었습니다.

- 이 중에서도 특히 군의 '허리'라 불리는 대위·중사급(경력 5~10년) 간부들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 전역 간부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병사 월급 인상과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경찰·소방보다 현저히 낮은 당직 수당, 수직적 군 문화 등이 복무 지속의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❷ 장교·부사관 충원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초급 장교의 70%를 차지하는 ROTC(학군장교)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ROTC 학군단을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관학교에 대한 선호도 역시 하락 중입니다. 2024년 사관학교 입학 경쟁률은 급감했고, 1차 시험 합격자 중 약 70%는 2차 시험(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입학 이후 자퇴 등을 통한 중도 이탈률도 약 20%에 달했습니다.

❸ 국방에 대한 헌신,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초급간부의 이탈에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 급여는 낮고, 복무 환경은 열악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군부대에 방문할 때마다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 반복된 약속에도 초급간부 복지 개선이 현실화되지 않으면서, 현장 간부들은 심각한 박탈감과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❹ 2025년도 국방예산안, 처우 개선은 뒷전입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초급간부 처우 개선 관련 12개 사업 예산이 2024년 대비 약 140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 단기복무장려금, 학군생활지원금, 당직근무비, 주택수당, 소대장지휘활동비 등은 동결되었고,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간부훈련급식비 등은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 현재 군 간부 당직수당은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으로 경찰·소방공무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간 형평성과 군인의 자긍심이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이제는 보여 주기식 약속이 아닌, 강력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❶ 초급간부 처우 개선 위한 국방예산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초급간부 처우 개선은 우리 군의 존립과 전투력 유지를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해마다 국군 장병 급여 인상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제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는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결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과거 병사 월급 인상 사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는 연평균 15%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첫해에 병사 월급을 80% 이상 인상한 바 있습니다. 강력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장병 처우 개선 예산을 확보해나가야 합니다.
- 국방예산 내 구조 개편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국방예산은 필수적으로 증액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재정 당국을 설득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방예산 내 초급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편성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직근무비 등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되는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보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❷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노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과 정당한 보수·보상 체계 구축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4조에서 '복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국가의 노력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정당한 보수와 보상의 의무'를 명확히 추가해 초급간부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❸ 군 간부 대상 '당직·위험수당 체계'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경찰·소방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군 간부의 당직수당, 위험수당 체계는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단순 인상 수준을 넘어 임무 강도·시간·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계된 가산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군은 임무의 위험성과 특성을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군 역시 임무 위험도와 파병 환경을 고려하여 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례를 토대로 우리 고유의 수당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을 어떻게 치유하고 통합할 것인가?

채현일 질문Q레이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 영등포구 갑)

1. 질문의 맥락

우리 사회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극단적인 분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통합과 치유를 위해 정치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❶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

내란 사태 이후 국민들은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대립하고 있으며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 세대, 성별, 지역,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특정 이념과 진영 중심의 과격한 정치적 행동으로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❷ 경제적 불평등과 헌정 질서의 붕괴 위기

부의 집중과 기회의 박탈로 인해 심화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와 맞물려 국민들의 불만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 내란 사태를 비롯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진실이 왜곡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심각한 불안과 불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이제는 보여 주기식 약속이 아닌, 강력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❶ 국민 통합을 위한 리더십 구축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통합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극단적인 이념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❷ 법과 원칙의 회복

헌정 질서를 복원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 사법 체계를 정비하여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잡아야 합니다.

❸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기회 보장

자산 불평등과 노동시장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 교육, 일자리,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❹ 헌법 개헌과 제도 개혁

87년 헌정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권력 분산형 개헌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권력 교체를 넘어 제도 개혁을 통해 구조적인 변화까지 이뤄 냄으로써 현재의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분열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양극화 해소 없이 경제적 안정,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가?

김남근 질문Q레이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 성북구 을)

1. 질문의 맥락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는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 안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❶ 산업 전환

우리나라는 플랫폼 경제, 에너지 전환, AI 전환이라는 세 가지 급격한 산업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 첫째, 과거의 자영업자들은 독립적인 자영업자였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자영업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플랫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의 특징은 독과점입니다. 한 업체가 월등하게 독점을 해 버리고 나머지는 고사되며 관련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종속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 둘째,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소멸해야 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확산에 따라 내연기관 관련 업종이 쇠퇴하고 있는데, 대구와 경주에 있는 내연기관 부품업체들은 2030년대가 되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셋째, AI 산업으로의 전환 이슈가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민주주의 위협 문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❷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우리나라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주가지수가 4000 정도까지 올라갔어야 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 밸류 업(국민의힘), 부스트 업(민주당)을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기업들이 주주들을 보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기업분할, 합병,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도 어려워집니다.

❸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자영업자 간 불공정거래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종속적 자영업자들 간의 불공정이 전통적으로 심하고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양극화의 결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 이 문제로 야기되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수의 축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독점이나 과점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자재 공급망이 교란되어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환율이 오를 경우 재료값을 올리게 됩니다. 소재 및 장비업체들이 이에 따라 납품단가를 높이지 못하면서 고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이 47%나 되고 해당 근로자는 600만 명이나 됩니다.

2. 해결 방안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현재 경제적 약자인 소액주주, 중소기업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고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하는 합리적인 부동산 금융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❶ 산업 전환 지원 및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전 세계적인 산업 재편 과정에 빠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정책을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 플랫폼 경제로 전환되는 흐름에는 따라가야 하지만 플랫폼화에 따르는 독과점의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사이에 동등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❷ 자본시장 개혁

이사회가 주주들에게 책임을 갖도록 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고 합병, 분할 상장,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으로 사업 구조 재편을 할 때에 주주들의 피해를 막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주주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 경영권을 위협받은 적이 없었던 재계에서는 배당을 늘리게 되면 장기투자를 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전개하는데, 투자자들은 기업이 투자를 통해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소재, 부품, 장비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성장하면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성장하는 구조인데, 대기업이 요구하는 전속적 거래 구조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 구조 아래에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1980년대 말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약 10%였지만, 현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갈 수 없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근로빈곤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 단체가 대기업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에는 독립 자영업자들이 별로 없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자영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와의 거래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집단교섭, 집단 협상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 종사자들의 삶을 개선하지 않으면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고 내수 침체도 이어질 겁니다.

❹ 금융 개혁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우리나라는 금융버블이 매우 심한 나라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금융버블의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막지 못했던 현상입니다. 대출로 확보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상환능력에 따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 대출 등의 과잉 대출을 줄여야 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가계부채를 줄여서 부동산버블을 줄여 놓아야 안정적인 경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LH가 매입에 나서면 2만 명이 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증권회사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해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배드뱅크 설립 등 금융적 해결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술과 체육, 그리고 창작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가?

이기헌 질문Q레이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 병)

1. 질문의 맥락

문화는 건강하고 탄탄한 사회적 기반 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술·체육·창작산업 전반에서 노동환경 악화, 저작권 문제, 비민주적 거버넌스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① 예술계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악화

❶ 초·중등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의 축소 및 예산 삭감

국악,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무용, 공예, 디자인, 사진 등 8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약 4800여 명의 예술 강사가 시간강사 형태로 고용되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예술 교육을 제공해 왔습니다.

- 그러나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이 위축되었으며, 그 결과 예술 강사들이 고용 불안과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던 예산이 지방 교육재정으로 이관되고 있지만, 각 교육청별로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입장이 달라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학교 예술 교육이 위축되면 학생들의 창의력 저하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❷ 방송·영화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 심화

OTT 시장의 확대로 인해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방송·영화산업 노동자의 고용 구조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방송·영화산업 종사자 중 정규직 비율은 10%에 불과하며,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 독립 · 예술영화 관련 지원 예산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면서 소규모 독립 창작자들의 제작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대형 자본 중심의 콘텐츠 시장 재편을 초래하여, 다양한 창작 기회를 위축시킬 우려가 큽니다.

② AI의 저작권 문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 공백

❶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보호의 부재

AI 모델은 기존 창작물을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시키지만, 창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보상 체계가 현재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최근 해외에서도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뉴욕타임스」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AI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 원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❷ AI 생성물의 저작권 논란

AI가 만든 창작물이 독창적인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철학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 낸 콘텐츠는 기존 저작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창작물로 인정할 경우 기존 창작자의 권리가 희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콘텐츠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창작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일부에서는 AI가 만든 콘텐츠로 인해 창작 노동이 줄어들면서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③ 체육 단체의 폐쇄적 운영과 거버넌스 문제

❶ 대한체육회 및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비민주적 운영 방식

지난해 파리올림픽 등 국제 대회를 거치면서 대한체육회 및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비민주적 운영 방식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 일부 특정 재벌가가 체육 단체의 운영을 장기적으로 독점하며, 폐쇄적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선수 선발 과정, 예산 배분, 협회 운영 등의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않으며, 내부 인사들의 부정부패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또한 일부 협회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체육정책이 선수 중심이 아니라 협회 관리자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체육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노동환경 개선, 창작자 보호 방안 마련, 협회의 거버넌스 개혁 등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❶ 예술계 종사자 지원 제도 복원

예술 강사 지원사업을 복원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존 8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복원하고, 지방 교육청과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여 예술 강사들을 위한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OTT·방송·영화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프리랜서·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독립영화 및 콘텐츠 창작 지원 예산 증액을 통해 다양성을 가진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❷ A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를 법제화하여 AI가 생성한 콘텐츠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원저작자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AI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이 창작자들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❸ 체육 단체의 거버넌스 개혁

정부 예산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체육 단체 내부의 운영 구조 개혁을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해야 합니다.

- 대한축구협회 등 폐쇄적 운영을 유지하는 단체가 공정한 선거 제도를 마련하는 등 팬과 국민이 신뢰할 만한 개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관리자가 아닌 선수 중심의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체육 단체 운영 방식을 개혁하고,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 안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윤준병 질문Q레이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북 정읍시·고창군)

1. 질문의 맥락

농촌 없이 식량안보가 가능합니까?

❶ 식량안보라는 명확한 목표가 최우선 과제

농어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식량안보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40% 미만으로, 특히 밀, 콩 등 전략 작물의 자급률이 낮아 식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략 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식량 안보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적 뒷받침을 해 줘야 합니다.

❷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중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 농업 종사자들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 기반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재해 대응 체계와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제, 농업재해 국가 책임제,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❸ 비어 가는 농어촌 공간의 재설계

농어촌 공간 활용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 지금 농어촌에서는 빈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빈집들을 정리하면서 정비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제2 새마을운동'과 같은 형태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식량안보를 중심에 두고 농업, 농촌, 농민을 다시 생각합시다.

❶ 식량안보의 중요성

식량안보는 생산과 소비를 시장 기능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작물은 수입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자급률을 5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략 작물을 정부가 수매한다면 현재처럼 쌀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 지금까지의 농촌정책은 주로 쌀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쌀농사의 기계화가 상당히 진척되어 경작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밀, 콩, 귀리 등 기타 작물은 기계화 수준이 낮고, 필요한 수리 시설 또한 달라서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쌀에 들였던 노력을 다른 전략 작물에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식량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농업을 바라볼 때 식량안보라는 거시적 관점을 견지하되, 시장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 외국산이 국내산보다 저렴하면 수입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시장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면 국내 식량 생산 기반이 점차 약화되며, 이는 곧 식량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닌 국가안보, 나아가 국방과 같은 전략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필수적인 책무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❷ 농지 개혁 및 활용 최적화

인구가 축소되면서 발생한 농촌의 유휴 공간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 우선 기존 농지 구조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량안보를 위한 최적의 재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되, 법정 리에 있는 6~7개의 마을 단위로 공간을 재배치하여 빈집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거 기능을 정비하고, 의료나 교육 기능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농촌 공간을 재편한다면 농어촌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농촌 공간의 산업적 재배치는 농지 내에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도입하여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생산된 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너지 생산이 활발한 지역에는 관련 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는 약 172만 헥타르이며, 이 중 쌀 생산에 이용되는 면적은 80만 헥타르입니다. 식량안보를 위한 적정 농지 면적을 계산하여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과 공존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❸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청년 농민 문제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스마트 팜 중심 정책을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 모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식량안보를 중심에 둔 정책을 통해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안정화된다면, 도시의 청년들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입니다.
- 현재 고령화로 인해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1인당 경작지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농가의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객관적 조건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에 의료·교육·문화적 요소가 충분히 보완된다면 농촌은 도시 주민과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팜은 농업 재편의 핵심 방향으로 자리 잡겠지만, 이를 만능 해결책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도시민이 3년가량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시작했다가 빚만 떠안고 실망하며 농촌을 떠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 농촌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들의 귀농보다는, 농촌을 이해하고 경험한 이들이 귀향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적응 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결국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가소득의 실질적 향상입니다.

❹ 농어촌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농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농촌은 노선버스 위주의 대중교통 시스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농촌 현실에 맞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노선버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반응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 아직 해결해야 할 법적인 이슈가 있지만 AI 기반 교통 및 개인이 보유한 자가용을 활용하는 공유 교통 시스템이 농어촌에서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1000원 택시'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이 좋은 이유도 농촌의 열악한 대중교통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업 분권화와 균형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허성무 질문Q레이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1. 질문의 맥락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양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 분권화와 지역 균형발전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❶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우리 사회의 지역 간 불균형, 특히 수도권/비수도권의 경제적/산업적 격차는 심각합니다.

- 대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지역에 위치한 전통적 제조업은 단순 생산 기지로 전락하여 지역 경제는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청년층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으며, 저출생·고령화 및 지역 소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❷ 과거 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

균형발전은 지난 20년간 국가적 의제로 다뤄져 왔으나 진전은 더딘 상황입니다.

- 정권의 입맛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이 중단되거나 변질돼 정책의 연속성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와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 수도권 규제 완화와 대규모 투자 유치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 제조업 쇠퇴 이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부족했고, 첨단산업 전환이나 재편이 미흡해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됐습니다.

2. 해결 방안

❶ 첨단산업의 분권화

기존 전통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을 첨단 정보통신 기술 및AI 기반 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정책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 현재도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존재하지만 수도권에 본사를 두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재정적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 정부 차원의 공공 벤처캐피털 투자를 확대해 지역에서도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❷ 교통 인프라 구축

지역 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입지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수도권처럼 통합된 광역 교통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부산, 울산, 창원, 대구 등을 연결하는 광역 전철망을 조성해 출퇴근이 편리한 생활권을 형성하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유기적 연계를 촉진해야 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들이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물류, 교통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고속 물류망 구축과 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으로의 인력 및 기업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❸ 제조업의 AI 및 스마트화 촉진

지역 제조업은 단순 생산 기능에서 탈피해 AI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제조업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❹ 안정적인 전력 공급

AI, 데이터산업 등 전력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하면서도 산업 성장에 맞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균형있는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박지혜 질문Q큐레이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의정부시 갑)

1. 질문의 맥락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전환은 우리가 직면한 시급한 과제인데, 정부의 정책은 너무 더딘 것 아닌가요?

❶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과 대응 부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했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뒷받침할 세부적인 정책들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후퇴시키는 등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이 계속 줄어드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감축 목표 이행을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전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❷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과제

온실가스 감축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을 넘어 산업 전환까지 요구합니다.

-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그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전통적인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위기를 기회로 바꿀 해법이 필요합니다. 기존 산업을 과거의 방식대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 철강 등 저탄소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이 맞물려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R&D지원과 정책적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및 산업 전환의 비전 아래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❶ 에너지 전환과 수요 관리 병행

기존에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전력 생산 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혁신해야 합니다.

- 가정뿐만 아니라 산업 부문의 효율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❷ 탄소 배출 비용의 내재화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같이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탄소 배출 비용의 내재화를 통해 시장적인 해법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비용은 현저히 낮아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10%에 머물러 있는 유상 할당 비율을 당장 급격하게 높이기는 어렵더라도 100%를 향해 단계적으로 빠르게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❸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풍력산업의 경우,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터빈 등 핵심 부품에 대한 경쟁력도 잃게 됐습니다.
- 넛셀, 하부구조물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❹ 책임감 있는 원자력정책

국내 전력 믹스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급격히 낮추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다만, 신규 원전 건설보다는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SMR(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는 기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여부는 원전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❺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이행

기존 화석연료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정책도 필요합니다.

-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위한 재교육 및 연착륙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❻ 기후 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

기후 위기 대응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정책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탄소 가격 정책, 에너지전환 로드맵, 산업 전환 지원 정책 등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후정책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하고 단기적인 경제 논리에 따라 기후정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정부적 의료 공급 체계,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않을까요?

김윤 질문Q레이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1. 질문의 맥락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붕괴, 왜 그런 것일까요? 필수 의료의 공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❶ 무정부적인 의료 공급 체계가 문제의 핵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정부적인 공급 체계'입니다.

- 의료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누구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정부가 오랫동안 의료를 시장 논리에 맡겨 방치한 결과, 의료 취약지 주민들은 아프거나 다쳐도 병원을 찾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수도권 병상 증설 및 분원 개원을 민간에 맡겨 무제한으로 허용한 탓에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❷ 필수 의료에 대한 낮은 보상: 비급여·실손보험 진료로의 쏠림 가속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낮은 보상으로 인해 의료진이 필수 의료를 기피하고,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실손보험 진료 영역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 의료 영역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 이하로 책정되면서,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는 비급여 진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수가 보상 체계의 불공정성과 필수 의료 분야의 과소 보상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❸ 중앙 집권적 의료정책: 지역 맞춤 전략 부재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 부재합니다.

- 정부의 의료정책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 없이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지역별 필수 의료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하달되는 정책은 의료 공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지역 완결형 공공·필수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❶ 지역의 의료 수요에 맞춰 의료 공급 체계 개편

의료 공급 체계를 지역 수요에 맞춰 조정하기 위해 권역과 지역 중심의 '진료권'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 지역별 의료 격차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면 취약한 진료권에 대한 전략적 개입도 가능합니다.

❷ 의료 전달 체계 정비

1차, 2차, 3차 의료기관 간 역할이 명확해야 합니다.

- 현재 대학병원에서 경증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진료하고 의원급 병원이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등 비효율적인 구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응급환자들은 병원을 찾아 전전하고, 암 환자는 치료까지 긴 기간 대기하고 있으며, 중환자실 부족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 종별 가산을 통해 종별 기능에 맞는 환자를 진료하였을 때 수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간 역할과 기능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❸ 수가 체계 개편 및 의료 자원의 재분배

비합리적인 수가 체계가 의료 자원의 왜곡된 분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수가 체계를 재정비하여 필수 의료 분야에 투입되는 재정을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의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 수술이나 진찰의 수가는 낮고 검사의 수가는 높아서 더 많은 검사를 유도하게 되는 상황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❹ 필수·공공 의료의 지방분권: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지역 상황에 맞는 의료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대학병원(국립대·사립대)-지역 거점 병원(지방 의료원·민간 종합병원)-지역 병·의원이 협력하는 '필수 의료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하고, 인력 교류와 성과 보상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시·도 단위에 필수 의료에 대한 책임·권한·의무를 부여하여, 지역별 의료 자원과 의료 수요를 고려한 자율적인 필수 의료 정책 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❺ 국회 차원의 '의료 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의료 개혁 논의를 정부와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닌 정부, 국회, 시민 다자 간의 논의로 전환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현재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강한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의료 대란 이후 의사들의 결속력이 더욱 강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료 시스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료 개혁은 의사 집단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의료 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합의에 기초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 정권에 따라 향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 단위 호흡의 계획들이 결정되고 뚝심 있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저출생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남희 질문Q레이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광명시 을)

1. 질문의 맥락

저출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저출생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평등하지 못한 돌봄,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와 지나친 경쟁 압박, 불안, 수도권 집중,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을 저출생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줄어드니 관련 기관과 시설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집 근처의 어린이집, 유치원이 사라지고 소아과도 찾기 어렵습니다.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 대학병원조차 소아청소년과 입원 치료나 응급의료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집과 가까운 어린이집에 보내고 소아과를 찾아가는 일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저 역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행복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보면 누구에게도 출산과 육아를 권유하긴 쉽지 않습니다.

❶ 청년세대의 주거 및 일자리 문제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내 집 마련'의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8명이 내 집 마련을 원하지만 부모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소득만으로 안정적 삶을 위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게다가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청년들은 학자금, 주택, 생활비 대출로 워킹푸어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꿈꾸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❷ 자녀 교육비와 지나친 교육 경쟁 부담 심화

- 자녀 양육 비용에 대한 몇 가지 국제 비교 연구에서 한국은 국민소득 대비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 양육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대학의 지나친 서열화 등으로 경쟁이 심하고, 아이들에게 과도한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세 고시'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과도한 입시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은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❸ 성평등과 거리가 먼 돌봄

돌봄의 부담은 성별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양육의 모든 책임과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 저의 경우 일과 육아를 여러 사람의 손을 빌려 저글링하듯 겨우 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에 간 아이가 아플 때면 누구도 아빠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 당연히 엄마에게 연락하는 현실만 보아도 육아의 책임이 엄마들에게 많이 쏠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맘'이라는 용어로 아이 엄마를 풍자하는 콘텐츠만 보아도 우리 사회는 아이를 교육시키는 건 당연히 엄마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육아를 전담합니다.
-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187분)은 남성(54분)의 3배 이상이며, OECD 국가 간 비교 결과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꼴찌

입니다. 이는 여성에게 가사 분담이 쏠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출산 직후 여성의 임금은 전에 비해 40%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독박 육아를 하면서도 집안일을 전담해야 하고 임금 패널티까지 감당해야 하는 여성에게, 출산은 너무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의 여성이 학력과 경력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커짐에 따라 출산에 의한 기회비용도 함께 커졌습니다. 커리어를 쌓으면서 출산과 육아를 동시에 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보면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❹ 아동 혐오와 양육자 혐오

여성들은 아이를 낳더라도 '노 키즈 존', '금쪽이', '맘충'이라는 용어에 녹아 있는 차별과 혐오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도 미성년 아이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20% 남짓에 불과한데, 아이와 함께 사는 사람이 소수인 사회에서 아이들은 점점 어색하고 불편한 존재가 되어 갑니다. 아이들을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는 공간과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도 문제입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서 아이를 몇 년간 키운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의 경험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 이해, 배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관련 혐오 표현 민원이 15% 증가했습니다. 노 키즈 존 등 아동을 배제하는 상업시설이 늘어나고, 아이와 양육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 쉽게 댓글로 달리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해결 방안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양육이 즐거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도는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낮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영양 수준 수치는 양호하지만 자기 자신과 개인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고 양육이 즐거운 활동이 되는 사회로 바뀌어야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인식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이가 있든 없든 간에 돌봄과 관련해 연대하지 않고 사회가 돌봄 부담을 나누어 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출산을 선택하기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여성과 남성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불평등 해소 노력을 통한 경쟁 압박의 완화, 사회적약자에 대한 존중과 같은 사회적 변화가 있어야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❶ 국가의 무한 책임 돌봄 체계 구축

출생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하는 등의 국가 무한 책임 돌봄 서비스를 구축해 아이를 낳아도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 결혼부터 양육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드림 패키지 등의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의료, 교육 등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모두가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❷ 성평등한 돌봄 환경 조성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이가 있든 없든 모두 깨어 있는 시간의 70%만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돌봄의 부담을 나누고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 나아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의 육아휴직 강화 등 돌봄에 대한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❸ 교육 경쟁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극심한 교육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서열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처럼 지역 곳곳에 질 좋은 교육과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교육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❹ 주거 및 경제적 지원 강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억 원을 10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등 신혼부부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 나아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서 자녀 수에 따라 부동산 원리금을 최대 50%까지 탕감해 주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환기의 노동시장, 새로운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용우 질문Q레이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천 서구 을)

1. 질문의 맥락

고용 형태가 다변화하고 산업전환이 가속화하여 과거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관계법을 포함한 기존 제도에 포섭되지 않는데,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❶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현재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공장제 시절의 법 제도로서 1사(작업장)-1고용 원칙에 기반하여 법 적용이 이뤄져 왔습니다.

- 그러나 신자유주의 이후 경영상 목적으로 인해 고용의 다변화가 이뤄졌고, 특히 전자적 매개 수단(플랫폼)을 이용한 형태의 고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최소 700만 명에서 최대 1000만 명에 이릅니다. 임금노동자 규모인 2000만 명의 절반 수준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조항 중 다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고 있어 전통적인 사각지대의 규모도 큽니다.

❷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사각지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제와 현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 1사-1고용 원칙은 사실상 집단적 노사관계에도 적용되어 1사-1단협과 같은 방식으로 구현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지만, 고용계약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하청 노동조합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없어 사실상 헌법상의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또한 기업별 단체교섭 시스템의 관행화로 기업의 규모와 지불 능력에 따른 차별과 격차가 온존하게 되는데, 이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이자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근로 기준을 수립하여 최소한의 보호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의 전면화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❶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관계 기준법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 법제를 전면 개혁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 폐지 과정은 단계적·점진적 과정을 취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영세-한계사업 사업주의 비용 부담은 사회 연대의 관점에서 부담을 공유하고 국가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❷ 근로자 추정 원칙의 도입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를 가짜 사업자로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포함)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한편, 사용자에게는 반론권을 보장하여 자신이 고용한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게 하여, 진성 도급이나 순수한 사업자-사업자 계약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ABC 테스트와 유사합니다.

❸ 일하는사람기본법의 제정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근로 기준을 보장하는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휴식, 휴가, 안전을 위한 작업 중지 등의 기본권을 근로기준법 상의 고용관계와 무관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기본법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 전체를 사회보험 체계 안으로 포섭하고, 여타 노동관계법(예: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무 제공자(일하는 사람)에게도 법조 적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❹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 3조 개정) 입법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2조), 쟁의행위의 정의(2조)를 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기여 부분만큼만 청구(3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 사용자 정의에는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공동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일본과 미국 등의 법리를 도입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며, 쟁의행위의 정의에는 이익 분쟁만이 아닌 권리 분쟁을 구법(쟁의조정법)과 마찬가지로 포괄하도록 합니다.
- 대법원 판례 법리로 확립된 배상 행위자별 손해배상 책임 원리를 노동조합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존 부진정연대채무 방식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귀책의 정도에 따라 행위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합니다.

❺ 산업별, 업종별, 초기업적 노사관계의 실현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노사관계를 산업별 노사관계로 점차 변화시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에 따른 임금 기준을 수립하여 평등을 도모하고, 사업장 단위 교섭으로 인한 갈등의 비용을 축소해 산업 평화를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 초기업별 노사관계를 수립한 사용자를 각종 행정 지원 등에서 우대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초기업별 교섭을 권장하고, 초기업별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사용자가 업종별, 산업별 사용자와 연합하여 교섭할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2025년의 우리 사회에서 누가 가장 불행할까요?

전진숙 질문Q레이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광주 북구 을)

1. 질문의 맥락

저는 우리 사회 체제가 불안정해지면서 만들어진 문제들이 집단 간 갈등으로 심각하게 비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체제가 불안하다는 증거로 2003년부터 부동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살률, 자살률과 샴쌍둥이 격인 극단적 저출생 상황, 그리고 최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필두로 한 사회 무질서 상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의 자살률 증가가 심각한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그 세대는 성적과 진학 그리고 직장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자살 선택 원인으로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업과 일자리를 둘러싼 무한 경쟁이 우리 미래세대를 자살로 몰아넣는 핵심적인 기제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은 사회문제 해결과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책무는 잊은 채 도리어 앞장서서 분열을 조장하고 집단 간 싸움을 획책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세대 젠더 갈등'이라는 담론일 것입니다. '남성이 가져가야 할 밥그릇을 여성들이 빼앗아 갔다'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통해서 젠더 간 싸움을 붙여 놓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꼴입니다.

- 젠더 갈등 담론의 주요한 구도는 남성이 '군대를 강제로 가야 해서 취업 준비할 시간을 빼앗긴 사이에 여성들은 취업에 성공하잖아!'라는 억울함으로, 여성이 '남성들이 사회의 고위직은 다 차지하는 데다, 여성들은 길거리에서 화장실에서 남성에 의해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로 서로를 비난하고 탓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한다는 정념을 뿌리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공부를 하면서 '젠더 갈등'이라는 노이즈 아래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여성도 남성도 모두 미래를 예측해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는 온전히 나이 들어 비참하지 않게 죽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공포를 너무 강렬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정치권과 우리 사회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끼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인구구조 변동, 경제적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 기후 위기 등과 같은 복합 위기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내란 사태로 인해 뒤로 떠밀린 민생 현안을 챙겨 나가야 합니다.

❶ 여성정책 컨트롤타워 정비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국정 과제를 발표하고, 현재 1년째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동, 청소년, 여성, 돌봄의 정책들이 약화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치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정책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필요한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2001년 여성부가 생긴 이래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 문제들 중 기회의 평등은 상당히 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평등으로 가는 과정에서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여성을 위한 전담 정부 조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 담론이 등장한 것과 같이 젠더 박스(성역할 고정관념)가 만들어 내는 폐해로 인해 남성도 여성도 모두 억압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적절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을 강화한 '양성평등부'로 개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23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1명이 단독 생계를 꾸리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6%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 모두는 혼자 살아가는 시기를 겪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가족, 그중에서도 여성이 가족 돌봄을 책임지기 어려워졌고 '자기 돌봄'과 '자녀 돌봄'에 대한 남성의 욕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돌봄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변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요즘은 AI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현재의 청소년과 청년이 맞이할 미래는 기성세대가 살아온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된 시대에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청년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는 뜻에서 여성가족부는 '미래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상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 사회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❷ 젠더 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 시스템 정비

여성을 향한 폭력은 전통적인 성폭행, 스토킹에서부터 교제 살인, n번 방 사건과 딥페이크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위 '묻지마 폭행'이라는 무동기 범죄의 경우에도 다수의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안전 문제에서 여성은 분명히 약자입니다.

- 특히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배포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어렵다는 특징 때문에 피해 확산이 빠르고 사회적 파장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를 거쳐야 하는 등 체계상 센터의 권한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성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형성해 줄 성교육을 강화해야 함에도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정책적 구멍이 커진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디지털 성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AI라는 신기술을 활용한 일종의 놀이로 인식하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 2024년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 사태로 현재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를 종결하고 여성 폭력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신사회문제에 대한 논의

이를 위해서는 구조의 확대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복합 위기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전략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는 2차 세계대전 경험자부터 군사독재와 민주화를 겪은 세대, 그리고 AI시대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공존합니다. 세대 경험의 격차가 크다는 구조적 특징을 가진 사회입니다.

또한 가족 유형의 다양성이 커지고 있으며, 외국인이 인구의 4.8%이고, 다문화가족이 인구의 4.4%로 다인종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이고 다양해진 국민들의 처지와 입장에 맞는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찰력을 발휘할 채널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손명수 질문Q레이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용인시 을)

1. 질문의 맥락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❶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위기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병역 자원 부족, 지방 공동화, 노동력 감소, 사회보장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출산율 감소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불안정성, 고용 불안, 교육비 부담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개입이 불가피합니다.

❷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주거비 부담

청년층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저출생 대응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주거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른 정책들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육아 지원금이나 보육 정책이 강화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청년층은 여전히 출산을 꺼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 출산율을 높이려면 파격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한데, 핵심적인 고민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입니다.

2. 해결 방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❶ 재건축 과정에서 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한 공공주택 확보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처럼 임대주택 단지를 별도로 조성하기보다는 재건축 과정의 용적률 증가와 공공주택 공급을 연계하는 것이 보다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방식은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에 비해 더 빠른 시간 안에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입니다.

-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으로 증가한 주택 일부를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더 큰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분양 전환 시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10년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민간 또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면 기존 임대주택은 다시 새로운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러한 방식은 한 지역에 다양한 계층이 혼합되어 거주하는 '소셜 믹스'를 실현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지역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❷ 그린벨트를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여 직주근접형 주거 단지 조성

산림 보호 기능과 환경적 가치를 상실하고 난개발로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구조화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판교 신도시와 같은 직주근접형 복합 단지 모델을 확대 적용하여 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자족형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국민이 선호하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공공주택을 조성할 때는 과거 보금자리 주택처럼 시세 대비 1/3 가격으로 분양하는 방식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익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러한 개발은 단순히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난개발로 인해 기능이 상실된 지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협회 및 단체 I

‘협회 및 단체 I’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추천한 56명의 시민이 던진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대형 로펌의 변호사, 언론사 기자, 환자단체 활동가, 노동조합 활동가, 과학자, 외교관, 소방관 등 다양한 직업군의 인물들이 참여했습니다.

각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필요한 질문을 진지하게 제기합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온 문제들을 지금도 해당 분야에서 활동 중인 행위자이기에 질문의 밀도가 높고 매우 구체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노동, 산업, 의료, 과학, 교육 등 2025년 한국 사회가 직면한 핵심 이슈들이 이들의 질문을 통해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 속 고민도 등장합니다. 만성질환 환자의 고단한 생활, 초중고 급식에 대한 소소한 의문이 사실은 복지, 농업, 노동, 교육 시스템 전반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너의 질문들은 거대 담론과 생활 세계가 만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정책이 구체적인 삶에 닿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협회 및 단체 I 목차

1	대통령실은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 국토부장관 변창흠
2	국회 경비대를 입법부 소속으로 둘 수는 없나요?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이건수
3	공무원은 왜 정치활동을 못 하나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철수
4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재정정책 방향은 무엇일까요?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현동
5	대한민국의 조세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류덕현
6	현행 세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유호림
7	왜 잠자는 학생들이 많은 교실 현장을 외면하나요?	「차라리 꿈꾸지 마라」 저자, 전 역사 교사 공기택
8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개정되지만 학교 현실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 병점고등학교 교사 정미라
9	고교 학점제는 학생 맞춤식 책임 교육 제도입니다. 그러나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 병점고등학교 교사 정미라
10	우리나라 과학계의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 연구단장 구본경
11	기초과학에는 연구 예산이 부족하고 대형 과제 및 특정 분야에만 투자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민영
12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과학기술이며 과학기술의 원천은 국가 과학기술이 아닌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정책실장 강혜랑
13	AI 시대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처럼 앞서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LG AI 연구원 전략부문장 김유철
14	방송통신위원회를 왜 정치권이 '나눠 먹기' 식으로 구성하나요?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박성호
15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균형은 왜 어려운가요?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김용희
16	우리나라의 경제 안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은 효과적인가요?	전 크로아티아 대사 서형원
17	외교 안보를 둘러싼 정파적 진영 대립, 이대로 가도 좋은가요?	전 크로아티아 대사 서형원
18	남북관계를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전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전공 특임교수 이덕행
19	경제 안보 위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아주대학교 이왕휘

20 검찰의 수사권과 국민의 피해, 그대로 둬야 하나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전준철
21 왜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나요?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황의석
22 12.3 비상계엄은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여석주
23 한미동맹,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증액 압박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미래안보포럼 연구위원 정한범
24 국방 개혁을 통해 민주적 민군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국방전문가 익명
25 우리나라에서는 왜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지 못할까요?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신정섭
26 우리나라에는 왜 후진국형 대형 화재가 잇따르는 건가요?	소방방재신문 기자 최영
27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서치원
28 반복되는 불법·위법 주주총회, 해법은 없을까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연구소장 윤태준
29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물류 마진 폭리 문제를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정종열
30 K-콘텐츠를 만드는 방송 노동자에게는 왜 노동권이 없나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김영민
31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가 왜 필요할까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정유훈
32 친환경 무상급식이 위험합니다. 다시 부모들이 아침마다 도시락 싸는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박정호
33 어렵게 독립영화를 만들어서 더 어렵게 극장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감독들도 마찬가집니다. 영화 정책은 독립영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원한다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원승환 관장
34 공익 직불금 제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강마야
35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 활성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업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종서
36 현재 대한민국 제조업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양승훈
37 글로벌 산업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남종석

38 보호무역과 경제 안보 중심의 통상정책 흐름 속에서 우리 산업의 미래 전략은 준비되어 있는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허정
39 에너지가 글로벌 산업 강국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광주과학기술원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 임춘택
40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대로 괜찮은가요?	플랜 1.5 정책활동가 윤세종
41 대전환 시대,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탄소중립 산업 전략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훈
42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서비스에서는 병원 전 단계(119 구급대)가 외면당하고 있지 않나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 김성현
43 농어촌 의료 취약지 병원은 왜 낙후되어 있나요?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신안대우병원 원장 최명석
44 디지털 기술과 AI, 왜 의료와 돌봄 분야에는 쉽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김미영
45 완치되지 않는 1형 당뇨병,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김미영
46 돌봄 국가 책임제, 대한민국은 국민의 노후를 지켜 줄 것인가?	한신대학교 교수 홍선미
47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정신 건강 문제를 '배제'와 '수용'으로 다루면서 인권을 박탈할 것인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 이한결
48 주 4일제는 과연 불가능한가요?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김종진
49 프리랜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성
50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없나요?	공인노무사,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유성규
51 왜 남녀에서의 약의 부작용은 다른 것일까요?	대한성차의과학회 회장 김나영
52 우리 사회는 왜 성평등(페미니즘)을 두려워하나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활동가 김연웅
53 차별과 혐오를 왜 방치하나요?	전 닷페이스 대표 조소담
54 전세 사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조정흔
55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김진규
56 건설 현장 외국 인력, 무엇이 문제인가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은정

대통령실은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변창흠 교수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전 국토교통부 장관

1. 질문의 맥락

다음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선택하고, 관저는 어느 곳을 사용해야 할까요? 현재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다음 대통령도 계속 사용해도 별문제가 없을까요? 식민지 국가나 과거 대한제국이 아관파천했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나라의 대통령 집무실이 외국의 군대나 시설에 연접해서 입지해 있나요?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매일 아침 엄청난 경호 차량을 대동하고 관저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을 하나요?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근무하는 대통령실은 상징성과 권위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안과 경계에도 차질이 없는 지역에 입지해야 하고, 관저는 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입지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는 반드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문제점은 입지 결정 과정부터 입지 자체의 취약성, 대통령 관련 시설과의 이격 입지, 확장 가능성 부족 등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❶ 대통령실 입지 결정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 무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2년 1월 27일 발표한 정치개혁 공약으로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에 구축하고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후 광화문 대통령실 입지를 위한 공개적인 조사나 논의 절차가 생략된 채 갑자기 용산 국방부 청사로 입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신임 대통령이 왜 단 하루도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입지를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무속인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를 사용하게 되면서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고, 합동참모본부는 다시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등으로 분산 배치하는 연쇄 이전을 유발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리모델링하느라 약 832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연쇄 이전 비용까지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❷ 대통령실과 외국 군사시설 인접 불가

용산에 입지했던 한미연합사령부와 미8군사령부 등이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용산에는 여전히 미군 관련 시설이 대통령실과 바로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 휴양시설인 Dragon Hills Lodge는 용산 미군 기지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존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있는 헬기장 및 출입 방호시설, 미국 대사관 관련 시설 등은 여전히 이전할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미군 관련 시설과 연접해서 입지할 수는 없습니다.

❸ 대통령실과 용산국가공원 기능 상충

대통령실은 안보와 보안이 중요한 반면, 용산 국가 공원은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개방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보안을 위해 주변 지역에 대해 엄격하게 접근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공원의 자유로운 통행과 휴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❹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련 시설 분산으로 인한 국민 불편

대통령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는 같은 공간에 입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관저가 격리되어 있는 경우 출퇴근 때마다 경호를 위한 교통 통제를 해야 합니다. 용산에는 귀빈 영접이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영접 시설이 없어서 호텔이나 청와대 영빈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격에 맞지 않고 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는다면 관저나 경호시설, 경호 부대, 영빈관 등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용산 국가 공원의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입지에서 한계가 많지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문제점은 입지 결정 과정부터 입지 자체의 취약성, 대통령 관련 시설과의 이격 입지, 확장 가능성 부족 등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❶ 대통령실 입지 속단 불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대통령실의 이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어렵고, 대통령 보궐선거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관저의 입지에 대해 누구도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 기간을 두지 않고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어떤 입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지를 강제하거나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기존 대통령실을 사용하거나 하루 이틀의 준비만 거치면 입주가 가능한 공간에서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❷ 대통령실 입지 신중 결정

현재 용산 대통령실이 장기 대통령실로서 적합하지 않다면 장기 대통령실의 입지를 별도로 결정해야 하지만 현재의 용산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를 다시 활용하지 않는다면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을 신축하는 경우 입지 결정과 단지 및 건축설계, 건축에 최소 5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시 대통령실과 장기 대통령실의 입지가 다르다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임시 대통령실에서 집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해결 방안

1차적으로 청와대, 광화문 종합 청사, 정부 과천 청사를 검토할 수 있고 세종시를 장기 입주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❶ 청와대

청와대는 개방되어 있지만, 다시 개방 조치를 취소하고 대통령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 점검이나 안보 및 경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몇 달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본관과 관저, 춘추관과 영빈관 등은 개방되었지만 비서동은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단기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소 비서동 여민 1관에서 집무를 보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도 취임 직후 여민 1관에서 집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대통령실이 완성될 기간 동안 비서동 인근 부지에 가건물로 대통령 집무 공간을 별도로 건립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서실이나 경호 및 경비시설은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저는 이미 전 국민에게 개방된 관저를 다시 활용하기보다는 기존 총리 공관이나 주변 안가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지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도 청와대가 과연 대통령실로 적합한지를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의 관저가 입지해 있던 장소이고, 총독 관저(大)-총독부 청사(日)-서울시청(本) 연결되어 '大日本'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식민지 시기 총독 관저 부지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드론이나 유도 미사일이 발전된 시기에 북악산을 방어막으로 삼고 있는 청와대 입지는 절대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악산 구릉과 계곡에 막힌 입지가 현대전에서 방어나 경계에 반드시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현대 무기와 방어 시스템을 고려하면 개방된 입지에 대통령실이 입지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이미 개방된 청와대의 출입을 통제하고 다시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를 다시 사용하게 된다면, 청와대 본관과 관저 등은 개방하되, 비서동 일원만 대통령실로 한정해서 국민들과 친밀도와 접근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❷ 광화문 종합 청사

광화문 종합 청사를 리모델링하면 단기적으로 대통령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층에 대통령실을 두고 고층에 관저를 설치하면 대통령실과 관저가 동일 건축물에 입지할 수 있습니다. 비서실과 경호시설 등 대통령 지원 기능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인근에 있는 외교부 청사나 주변의 생산성 본부 건물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광화문 대통령실을 선언했지만 결국 실행되지 못했던 문제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 청산과 국민과 가까이 다가간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해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은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대통령실이 불가능했던 사유가 전혀 해소되지 않는상태에서 또다시 광화문 정부 청사를 대통령실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영빈관이나 헬기장, 경호 부대 등 대통령 관련 시설이나 기능들이 동일한 장소에 입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통령실 근처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광화문 광장의 기능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❸ 정부 과천 청사

정부 과천 청사는 오랫동안 정부 부처가 입지했었고 현재도 중앙정부의 부처와 기관들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지가 기존 기능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부처와 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비서동, 경호 및 경비 기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을 만큼 여유 부지나 건축물이 충분하고 입지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적다는 점은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대통령 집무실이더라도 서울이 아닌 과천에 입지하는 것이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에 입지해야 한다는 기존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 해소나 지역 균형발전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과천청사는 처음부터 대통령실이 아니라 중앙 행정 부처의 일부를 이전하기 위해 조성되었기 때문에 공간 배치나 구조가 대통령실에 적합하지 않고, 장소의 상징성이 크지 않습니다.

❹ 세종특별자치시 국가 상징 구역

세종시는 처음부터 신행정수도로 구상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회 등 수도 기능이 동시에 입지할 수 있도록 도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의 가장 중심 지역인 국가 상징 구역에 국회 세종 의사당을 건립 중(2025년 착공, 2030년 준공 예정)에 있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도 건립 예정(2027년 완공 예정)입니다.

서울과 과천에서 대통령실의 적합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면, 당초 세종시 건립 정신에 맞도록 행정수도로 세종시를 완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실과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서울과 세종으로 분산된 행정 기능이 통합되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서울 중심의 사회경제 구조와 서울에 있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 때문에 국무총리와 장관, 고위직 공무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세종 집무실 근무일 8.2%, 세종 공관 활용 비율 3.8%) 이에 따라 세종시는 하위직들이 주로 머물면서 행정도시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서울의 일극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가장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사업이자, 포용과 공정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강한 의지가 있음을 정책을 통해 보여 줌으로써 다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 대통령실의 충청권 이전은 충청 초광역권(메가 시티)에 수도 기능과 행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충청 초광역권의 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충청 초

광역권의 발전은 전 국토가 서울과 수도권 일극 집중을 넘어 초광역권들이 역할 분담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지나간 긴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당시 선조들은 어떤 선택을 통해 어려움을 돌파했는지,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재앙에 직면했는지, 어떤 훌륭한 선택으로 이 나라를 바꾸었는지 등을 배움으로써 역사적 상상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 시 거치게 될 절차와 과정은 이러합니다.

- 세종시의 행정수도 구상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의해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변경되면서 대통령실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서울 일극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차기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에 수도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에 수도 입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도록 하는 내용도 선거 공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공약을 채택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세종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건설계획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야 하고,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종합 계획에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 건설 계획이 수정되어 반영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의 서울 일극 집중이 갖는 부작용과 서울의 지속가능성 부족에 대한 자료가 전 국민에게 소상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을 통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 둘째, 행정수도 완성을 기반으로 충청 초광역권의 종합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충청권과 세종시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초광역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셋째, 세종시와 충청권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전하게 되면 충청권 집중에 대한 다른 지역의 우려와 견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초광역권에 대한 발전계획을 함께 발표해야 합니다. 지방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포함한 국가 균형발전 계획에서는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충청권에 대한 견제심을 이전 기관 유치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넷째, 초광역권은 단순히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분산 기능만이 아니라 대학 및 민간 부문의 혁신 지원 기능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초광역권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전함으로써 초광역 및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도록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 다섯째,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적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밀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취해졌던 수도권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 대도시 서울과 세종 행정수도가 역할을 분담하고 지방 초광역권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비전과 전략을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 경비대를 입법부 소속으로 둘 수는 없나요?

이건수 교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1. 질문의 맥락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오려는 국회의원 및 직원들을 국회 경비대가 막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회 경비대를 입법부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❶ 국회 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 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근무했던 경찰관들도 왜 우리가 국회에서 근무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에 중요한 국회의사당 스스로 국회의장의 지휘를 통해 국회 경비 관련 업무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서울경찰청 지휘를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회 경비대에 의해 국회가 봉쇄되고,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의 진ㆍ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부 국가 권력자를 통해 언제든지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선임된 국회의원의 신분과 업무가 제약되고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 쟁점은 첫째, 국회 대표자인 국회의장의 지휘에 반하는 지시가 집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권분립과 상충됩니다. 둘째, 국회 자체 경비 업무에 따른 법률안 및 운영 규칙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인원 부족과 근무를 위한 별도 시설 운영 건물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경찰과 자체 국회 경비대의 원활한 소통, 업무 협조도 필요합니다.

2. 해결 방안

국회 경비대는 철저하게 국회 소속의 기구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❶ 국회 경비대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

현재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와 의전, 경호, 경비는 국회 소속 인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등을 맡는 국회 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대로 운영됩니다. 지휘권자는 서울시경 공공안전차장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처럼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문 봉쇄를 명령하면 국회 경비대가 지휘권자의 명령을 받아 언제든지 국회의원을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국회 소속으로 독립 운영안을 만들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 경비대를 국회의장 산하 직속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가 국회법 13장(질서와 경호)에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국회 경비대 의회 경찰을 채용하고 교육 및 관리 업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수준의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7조에 경호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왜 정치활동을 못 하나요?

이철수 위원장
국가공무원노동조합

1. 질문의 맥락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해서는 가입해서는 안 되고, 서명운동이나 공공시설 등에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SNS에 공감과 댓글만 남겨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현실입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헌법 7조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장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처럼 헌법의 가치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천부적 권리인 정치 기본권은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시대적 흐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❶ 공무원의 전면적 정치적 행위 금지

현행 '공무원노조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노조법 등)의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종래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특별 행정법 관계 이론,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제2항) 등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특별 행정법 관계 이론은 19세기의 공법 이론으로서, 공무원은 국가에 복종할 의무만 있을 뿐 기본권(정치 기본권 등)은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공무원은 단순히 국가의 지배 객체가 아니라 공적 기능 수행의 주체이자 기본권 주체인 일반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승인되고 있으며, 특별 행정법 관계 이론은 박물관으로 보내져야 할 과거의 유물일 뿐 학계에서도 이러한 고전적 특별 관계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 또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적 영역'에 국한되기에 사적 생활 영역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위 대부분 선진 국가의 현황이며 정치적 중립성 또한 그런 면에서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근거, 쟁점들의 잔상이 대중적으로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권 및 시민사회 진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 해결 방안

헌법 제7조가 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헌법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를 역해석하여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의 '정치적 중립'을 공무원의 지위 및 직무 관련 중립으로 변경,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공무원 제외 단서 삭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66조(집단행위의 금지) 삭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삭제가 필요합니다.

❶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행사 금지 규정의 개정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치운동을 금지하는데 제84조의 2처벌 규정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아니라 제66조 집단 행위 금지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 탄압 규정을 정치적 의사 표현 탄압 수단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대착오적 규정이자 법체계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헌재 1992.6.26.90헌가23; 헌재19996.24.97헌마265)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공무원 노동단체와 교원 단체들은 개헌안에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과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안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1960년 4.19 혁명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현행 헌법 제7조 제2항의 취지에 맞게 하위법을 개정하기만 하여도 공무원이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대중들에게 강한 잔상으로 존재하는 공무원 정치 기본권 제한의 근거인 특별 행정법 관계 이론,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제2항)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❷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 마련

미국의 정치학자 애론 윌다브스키는 「스피킹 트루스 투 파워(Speaking truth to power)」에서 공무원의 사명을 '절대 권력자에게 직언하기', 더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 주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작금의 내란 사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항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공직자의 가슴 아픈 소식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수사·고소·고발·구속 등의 조치로 적극적 업무 수행이 곤란하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가두는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헌법 수호와 유지를 위하여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그 첫 발자국이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재정정책 방향은 무엇일까요?

김현동 교수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1. 질문의 맥락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최근 경제 상황이 심각한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정정책은 무엇인가요?

❶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성장이라는 이중고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는 것은 경제구조적 측면의 중장기적 추세로, 그 구체적인 원인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총요소생산성 및 자본투자 증가세의 둔화 등입니다.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된 끝에 잠재성장률을 밑돌게 되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입니다.

❷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 필요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감세정책, 재정 긴축 기조로 인해 정부 역할이 매우 제한되고 미흡해진 상황입니다.

2011년~2022년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연평균 0.7%였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그 수준이 하락했습니다. 2023년의 기여도는 0.3%였고, 2024년과 2025년의 기여도는 각각 0.3%, 0.5%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❸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재정정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

국가재정은 주로 조세 징수를 통해 재원을 거두고 이를 지출하는 과정을 통해 자원배분, 소득분배 및 경기조절에 관여합니다.

세금에 대한 국민 간 갈등이 첨예하고 조세저항이 높아 합의 도출이 난망한 상황과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가,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만나면서 현재의 저성장 국면이 야기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조세부담과 재정지출 수준에 관한 합의를 마친 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 재원이 분배될 수 있도록 지출 개혁을 달성해야 합니다.

❶ 정부 주도 세제개편의 한계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증세와 감세를 둘러싼 견해 대립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증세에 찬성해도 어느 계층의 세부담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 단편적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여론이 형성되는 구조는 갈등을 해결보단 조장합니다.

❷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구 설치, 재정수입의 대부분인 세금 수준을 숙의, 국민 합의로 결정

전문가들이 숙의를 위한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의 기구에서 논의하도록 합니다. 역대 정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사실상 실패했거나 반쪽짜리 성과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간 세제 부문에서의 대타협 시도는 없었고, 과거 대타협 사례와 달리 뚜렷한 관련 이익단체가 없어 합의 도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❸ 재정지출 수준과 지출 분야에 대해 합의 도출

재정지출 역시 세금과 같은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합의 도출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정지출 분야에 관한 합의는 가장 난도가 높은 연금, 노동, 교육 등 구조개혁과 관련된 것부터 시작합니다. 과거의 실패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합의에 임하고, 성급한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다소 긴 호흡으로 이견을 좁힌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세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류덕현 교수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1. 질문의 맥락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최근 경제 상황이 심각한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정정책은 무엇인가요?

❶ 재정정책의 핵심은 경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경제성장은 곧 국민의 삶의 질과 기회의 문제입니다.

- 성장 없는 경제는 결국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경기침체기에 긴축 일변도로 재정을 운용하면 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 정부 재정의 역할은 단순한 균형 유지가 아니라,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 최근 3년간 세수 부족 사태가 지속되었음에도, 정부는 긴축 기조를 고수합니다.
- 감세정책과 세입 부족이 맞물려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❷ 낙관적인 세수 전망과 긴축재정의 부작용

과도한 세수 전망이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습니다.

- 정부는 2025년 국세 수입을 382조 원으로 전망했으나, 이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세수 오차를 고려할 때 비현실적입니다.
- 법인세 감소, 감세정책이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세수 부족이 예상됩니다.

긴축 기조를 이어 가고 있어 경기 대응 여력이 부족합니다.

- 법정 의무 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량 지출 여력이 부족해졌습니다.
-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작동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건전성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❸ 경기침체, 긴축재정, 감세정책이 맞물린 악순환

정부의 감세정책이 세입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 법인세 감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부세 완화 등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 중입니다.
-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긴축재정을 강요하면, 다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세수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입니다.

국가 채무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우선입니다.

- 국채 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재정의 운용 방식과 성장 촉진 효과입니다.
- 세입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긴축재정만 강조하면, 결국 복지 축소와 경기침체로 귀결될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민주당이 재정 개혁과 경제성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혁신 성장과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재정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 구축입니다.

❶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 회복

긴축재정이 아닌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한 경기 대응을 위해 최소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합니다.

-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 법인세 감면 정책을 재검토하고, 대기업·고소득층의 공정한 세부담을 강화해야 합니다.
- 조세 정의를 실현하면서 복지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❷ 혁신 성장과 미래 산업 투자 확대

국가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R&D 예산을 단순히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바이오산업 등 차세대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 중심의 금융 구조에서 혁신 기업 중심의 금융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 핀테크, AI 스타트업 등의 미래 기업들이 국내 금융권에서도 투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❸ 재정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 구축

경기 대응력을 갖춘 재정 운용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 국가 채무 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운영의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 불필요한 감세정책 철회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장기적 재정 개혁을 실시해야 합니다.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복지재정 확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 조세 개혁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유호림 교수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1. 질문의 맥락

우리나라 세법상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문제점을 알고 있나요?

❶ 기업의 해외투자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개요

우리나라는 2022년에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개정한 바,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의 95%에 대하여 사실상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명목상으로는 국제간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 그러나 국제간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에서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방법도 있습니다.
- 즉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은 필요하지만,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다른 규정으로도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❷ 우리나라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문제점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시행에 따른 국내 자본과 기술의 유출 가능성,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산업공동화와 일자리 감소, 그리고 규정의 남용으로 인한 조세 회피(역외 탈세)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 오히려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규정의 적용 대상인 해외 자회사의 지분 요건을 기존 25%에서 10%로 인하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해외 자회사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그 수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동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친족 범위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와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벌)기업집단이 해외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혹은 '일감 떼어주기')를 시도하거나 해외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국내 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도 개정하였는데, 그로 인해 국내 (재벌)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증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등 국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도입과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❸ 글로벌 자유무역체제의 붕괴와 보호무역체제로의 급격한 전환 등 거시환경의 변화

미중 패권 경쟁에서 촉발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는 순차적으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과 글로벌 인베스트 체인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주지하듯이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조세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예컨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IRA 시행(미국 국내 투자에 대한 조세 우대 및 보조금 지원) 및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는 우리나라의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이 본국 투자와 생산을 축소하고 미국으로 투자와 생산설비를 이전, 확대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 EU의 CBAM 및 CRMA 역시 EU로 수출하는 제품과 상품에 대한 조세부담 증가(CBAM)와 차별적 보조금(CRMA)을 핵심 수단으로 하는 바, 결과적으로 다국적기업이 본국 투자와 생산을 축소하고 EU 역내로 투자 및 생산시설을 이전하도록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글로벌 동향의 변화는 미중 양국의 체제 충돌(regime clash)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 충격이 아니라, 향후 1세대를 관통하여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구조적인

변화와 충격을 야기는 장기적 충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 또는 단발적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전략적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시행 이후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대기업의 2024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배당금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법인세(특히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관련) 납부액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다면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투자와 고용 모두 축소될 것입니다.
- 요컨대 현행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우리나라 산업의 공동화 및 국내 투자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바, 결과적으로는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재벌(대기업)의 지배주주 등에게 조세 우대권을 부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2. 해결 방안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❶ 주요국의 연구 결과 및 정책 대응 검토 필요

미국과 영국 등의 학자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시행하였던 EU, 영국, 일본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실증연구를 진행했습니다.

- 이에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의 시행 이후 나타난 고용 감소와 생산시설 이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해당 규정을 전략적 조세회피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시행 중입니다.
- 미국의 경우 MRT(의무송환세), GILTI(간주 무형자산 소득과세), FDII(국외 발생 무형자산 소득공제) 등의 제도를 설계하여 한계 유효 세율을 설정하는 등 조세회피(또는 역외 탈세)를 방지함과 동시에, 다국적기업들이 미국으로 제품 생산 및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독일의 경우 2024년 ATAD(반조세 회피 규정)와 외국 거래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외국 자회사와의 수동 소득 관련 거래 및 독일 기업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자국의 자본과 기술 및 생산설비 등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❷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현황 파악 필요

상술한 학자들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EU 역내 국가 및 영국과 일본 등에서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이후, 해외 자회사 소재국에서의 자본 지출과 고정자산투자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연구개발비가 증가했고, 국내 모회사의 배당수익률과 자사주 매입 등의 주주환원율은 제고되지만 국내 투자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자회사 소재국으로의 소득 이전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는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결과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는 감소했지만 해외투자(특히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투자)는 증가했고, 국내 모회사의 배당수익률은 증가했지만 국내 세수가 감소했거나 자회사 소재국으로의 소득 이전이 초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시행한 이후 2년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여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찾기 어렵지만, 이미 2023년도에 주요 대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십조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국내 투자 규모를 확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국과 EU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자본재 수출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2023년 주요 대기업의 결산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가 약 29조 원, 현대자동차가 약 3조 5000억 원, LG전자가 약 1조 7000억원, 기아자동차가 3조 7000억 원 등의 수입배당금을 재무제표(현금흐름표)에 계상하였는데, 이후 이러한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렸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미국(텍사스주 등)과 EU 회원국의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❸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 상황과 글로벌 정치 경제 동향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제안한 '국내생산 촉진 세제'는 매우 바람직하고 유효한 정책이지만, 그에 앞서 해외투자와 해외 생산을 촉진하고 있는 기존의 세법 규정(즉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아니한다면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시행되더라도 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상술한 것처럼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시행하였으나, 시행 연도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현재 국내 투자나 고용이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당해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 등의 배당수익률과 해외 자회사의 자본투자 및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해외투자(특히 대미 투자) 지원으로 인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업들이 대규모의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은 우리나라 전략산업 자본과 기술의 해외 유출 및 국내 산업의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 및 세수 감소를 지원하는 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폐지하거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중 일정 비율을 국내에 투자(생산설비 증설 등)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등적용하고, 미국의 MRT나 GILTI 등을 참고하여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왜 잠자는 학생들이 많은 교실 현장을 외면하나요?

공기택
전 역사 교사
「차라리 꿈꾸지 마라」 저자

1. 질문의 맥락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교실에는 수업을 포기하고 잠자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한참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여야 하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자신과는 관계없는 많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느라 죄수처럼 잡혀 있습니다. 입시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고2, 고3이 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져 공부도 하지 못하고 미래 진로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못한 상태로 학교에 출석해서 들어도 소용없는 교과를 억지로 이수하느라 잠자고 있는 게 대한민국 대부분의 고등학교의 모습입니다. 입시를 위한 경쟁교육에 떠밀려서 변별력만 강조하는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실에서 높은 등급을 달성한 소수의 학생은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할 이유가 있겠지만 상대평가에서 밀려난 대부분 학생은 공부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에 잠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런 사실은 고등학교 선생님들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다양한 방법과 훈계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상대평가라는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을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❶ 우리 교육을 죽이고 있는 현재의 상대평가

변별력을 강조하고 상대평가를 놓지 못하는 대한민국 교육은 소수의 등급이 높은 학생을 불안하게 하고, 다수의 등급이 낮은 학생을 좌절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 현재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시간만 지나면 성취 수준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학년이 올라가고 수준 차이가 나는데도 모든 학생이 학년별로 공부합니다. 실력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학생이 시간이 지나도 같은 학년으로 진급하다 보니 한번 등급이 뒤처지면 다시는 뒤집기가 힘들어집니다. 교과에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이나 미성취를 보이는 학생이 모두 시간만 지나면 학년이 올라가게 됩니다.
- 그러다 보니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은 고학년이 되어도 대부분 지속해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되고, 한번 정해진 등급은 대부분 졸업할 때까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학생에게 좌절감을 주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교실에서 그 중요한 시기에 잠을 잡니다.

❷ 수시 학생부 교과, 수시 학종, 정시 수능 삼중고를 겪는 고등학생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은 대입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물론 많은 학생은 그 훨씬 이전부터 대입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고등학교 3개년 과정 모두가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도록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입 만을 위한 공부는 점수만 획득하려는 경쟁심만 부추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부가 재미있을 수가 없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학생부 교과 수시를 보기 위해서는 내신 등급이 좋아야 하고, 학생부 종합 수시를 위해서는 내신뿐 아니라 수많은 활동을 해서 업적을 만들어야 하며 정시를 보기 위해서는 수능 등급이 좋아야 합니다. 현행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3년간 꾸준히 공부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내신과 업적과 수능 모두에서 좋은 등급을 맞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3년간 많은 교과목과 업적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수능을 위한 준비까지 하기 위해 전념해야 합니다. 좋은 등급을 향한 학생과 학부모의 열망은 늦은 시간까지 사교육에 몰입하도록 만듭니다.

다행히도 일찍부터 좋은 등급을 갖게 된 일부 소수의 학생은 힘들어도 좋은 대학에 합격하겠다는 희망 속에서 공부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학생은 좋은 등급을 위해 애쓰다가도 한번 벌어진 등급을 다시 회복하기에는 어렵다는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노력해도 자기는 안 될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노력조차 포기하게 됩니다.

❸ 한국사의 수능필수 응시과목화의 문제

현재 한국사는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수능에서 필수 응시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치가 오히려 학생들이 한국사 공부를 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 북한 정권은 주민이 남한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차단하고 남한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막고 있으나,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남북한 사이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결국 상호 이해가 깊어져 갈등이 줄어들고, 평화와 공존이 일상화되어 남북한 국민에 의한 통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현재 한국사는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수능에서 필수 응시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치가 오히려 학생들이 한국사 공부를 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 한국사는 수능에서 9등급 절대평가로 평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4등급만 맞으면 대학입시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수능 한국사 문제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한국사 평가의 중요도는 떨어지는 데 비해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은 과도하게 많습니다. 용어들도 어렵고, 굳이 학생들이 배우지 않아도 될 내용까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습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도 입시에서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학생들이 그런 한국사 공부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입시를 위한 한국사 공부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없는 한국사 수업으로는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상대평가 체계를 통과/실패의 절대평가로 바꾸고, 대입 수능을 입학 자격 시험으로 변경하되 고 1을 마친 시점에 보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사를 수능 필수 응시 과목에서 제외, 고등학교 과정의 필수 이수 교과로 지정합니다.

❶ 평가 방법을 단계별 통과/실패의 절대평가로 변경

모든 교과를 학년제와 연동시키는 현재 학교 체계를 수준별 단계별 교과제로 바꾸어 통과/실패(pass/fail) 절대평가로 해야 합니다.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모든 교과에 대해 교과의 내용 수준에 따라 1부터 12단계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학년과 상관없이 학생들은 수준에 맞는 단계별로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가 끝나면 절대평가를 통해 통과하게 되면 다음 단계의 과정을 이수하고, 실패하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고학년이 되어도 교과별로 다른 단계의 성취를 인정받게 해야 합니다.
- 어떤 학생은 영어를 좋아해서 12 수준의 성취를 이루게 되고, 수학은 부족해서 8수준, 국어는 11수준, 사회는 10수준, 과학은 5수준의 자격을 갖게 되겠죠. 모든 학생을 한 학년에 몰아넣고, 죽음의 경쟁으로 몰고 가는 현재의 평가제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수학을 못하더라도 국어를 잘할 수 있고, 과학을 못하더라도 윤리를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❷ 대입 수능을 입학 자격시험으로

대입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만들어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고 1 과정을 마친 학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년과 상관없이 여러 번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준비된 학생들은 누구라도 어느 때라도 응시하게 해야 합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 하는 시험이 아니라 대입을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시험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입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에 통과한 학생은 고2 또는 고3이 되기 전에 먼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가서 상담하고, 그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과목을 지정받고, 2년간 그 최소한의 과목만 공부해서 대학입시에 응하도록 합니다.

대학에서는 수학능력시험에 통과한 학생이 고1 과정까지 학교에서 얻은 교과별 수준(국어 수준, 영어 수준 등)을 받아 보고, 대입 시험 성적과 더불어 합격·불합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평가를 하지 않아도 대학은 꼭 필요한 학생을 얻을 수가 있고, 학생들도 필요 없는 교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학교에서 엎어져 자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❸ 한국사는 대입필수 응시과목에서 해제

내용을 쉽게 해서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며, 시험을 봐야 하는 부담에서 떠나게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역사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개정되지만 학교 현실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미라 부소장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병점고등학교 교사

1. 질문의 맥락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국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매우 중요한 방향이자 구심점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그야말로 문서상으로 존재할 뿐 교육의 현실은 매번 도돌이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따라 대입 제도가 개편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❶ 대학입시가 교육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

대학별 취업률의 변화나 대학입시에서 사교육비 급증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심각성만 논의될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핵심은 대학의 서열화입니다. 의약 계열에 대한 쏠림과 더불어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이 말도 안 되는 수능 성적의 서열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 취업률과도 일치하지 않는 오래된 서열의 허상에 학부모와 학생은 희생되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따라 대입이 조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 중에도 대입을 모르는 교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❷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간극 조정은 정부의 책임

지금까지 정부는 미래를 준비하고 학생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욕망인 대입 제도에 있어서는 현명한 결정을 해 오지 못했습니다.

대입 제도의 경우 정치권의 득표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때문에 국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대입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가 교육과정은 매번 좌초하고 교사들은 혼동 속에 국가 교육과정의 방향을 추구하기보다는 수능과 연계된 EBS 문제집을 선택하여 보편적으로 보이나 불법적인 수업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대입 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❶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대입 제도 개편 동시 추진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대입 제도도 그에 따라 개편되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국가 교육과정과 대입 개편 방안을 동시에 발표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권 정당의 관련 인사들로 위원회가 조직되고 있어 교육의 미래를 논의해야 하는 기관이 보수와 진보의 대립 구조가 팽배해 있습니다.

대학 교수와 사회 저명인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대입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협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공개하고 국민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놀랍게도 일본 식민 사관의 시선으로 교육을 설명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❷ 국가교육위원회의 혁신 필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교육의 미래를 균형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건강한 관점과 사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건강한 사고를 갖춘 학부모와 학생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의 경우 학생 위원이 1년 임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❸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혁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임기 시작 전에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되다 보면 보수와 진보의 갈등 구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위해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자의 입장을 토로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조직은 진영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이해와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고루 갖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과정과 대입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와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와 대입 제도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리더란 국민의 의견에 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입이 바로 그러한 영역입니다.

언론보도 이전에 기자들에 대한 교육과정과 대입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자들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잘못된 정보들이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역별 워크숍이나 설명회를 활성화해야 하며 방송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토론회나 포럼 형태보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대입 개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육과정과 대입 개편의 방향을 호도하는 언론사나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합당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 맞춤식 책임 교육 제도입니다. 그러나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미라 부소장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병점고등학교 교사

1. 질문의 맥락

고교 학점제는 학생 맞춤식 책임 교육 제도로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교육제도입니다. 아직은 고교 학점제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에 대한 오해와 부담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❶ 고교학점제는 학생맞춤형 책임교육제도

고1 공통 수학, 공통 영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교는 지금까지 다음 학기, 다음 학년에 더 위계가 높은 과목들을 개설할 뿐 아니라 EBS 문제집으로 문항 풀이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이어 왔습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른 교육과정이란 학생의 배움의 준비와 수준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는데 교사들은 어떠한 지원도 없이 1~2개 과목을 추가적으로 지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에서는 수능 위주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면서 다과목에 대한 부담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의 경우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수능 과목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기 때문에 학생의 선택이 거의 전무합니다.

❷ 교육부와 교육청의 실질적인 지원 부재

1개 과목이라도 담당하는 과목이 증가하면 교사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수업 준비와 평가 출제 등의 부담이 2배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1개 과목 담당 교사나 2개 이상 과목 담당 교사나 월급이나 수당의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2개 이상 과목 담당 교사들의 불만과 업무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소인수 과목 개설로 인해 방과 후에 정규 수업이 증가하여도 초과근무 수당 이외에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아서 교사들이 대부분 회피합니다.

현재 학교는 행정 학급으로 학급을 편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교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학생 과목 선택으로 수업 학급이 증가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사에게 부여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은 고교 학점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동의하기가 어렵고, 학생과 학부모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사교육은 고교 학점제로 돈벌이를 시작했습니다.

2. 해결 방안

고교 학점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현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❶ 고교학점제의 정상화를위한 교육부와 교육청의지원 필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었지만 학교 현장은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좌충우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못합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전 교사 대상으로 의무 연수 및 워크숍이 진행되야 합니다.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변화에 대해 모르는 교사들은 수업·평가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학생 맞춤식 책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단위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 사례의 경우 학교(성공 학급 운영)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을 위한 보충수업, 진로 학업 설계 지도, 성취 평가제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진로를 찾고 적절한 교육을 받는 과정과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적절한 보충 지도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공교육의 합당한 역할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❷ 학교 현장과의 직접 소통

행정 학급이 아닌 실제 수업 학급을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학교당 교사 1~2명을 배치해서는 이 문제를 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전국 평균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 맞춤식 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사의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전문성을 실질적이고 의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범대학 4년으로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성취 평가제(절대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이유는 교사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문성은 지속적으로 함양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수업 담당 교사와 행정 담당 교사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각종 행정을 도모하면서 수업과 평가의 질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이 교사들이 효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업과 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학교가 진로 학업 설계와 책임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 분담과 수업 평가 부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❸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지원도 필요

고교 학점제를 운영해야 하는 주체인 교사에 대한 지원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행정 학급 대신 수업 학급을 기준으로 교사 배치를 해야 합니다.

다과목 지도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적절한 보상을 포함하여 학교 업무에 있어서도 부담을 감소시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다과목 지도를 수용할 수 있어야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진로 학업 설계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의 전문성도 미흡한 상황에 학교에 강요하는 것은 교육과정 파행과 편법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 전문성 함양과 교사 증원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별 지원 체제를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상담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교 차원을 넘어 지역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교육 버스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을 10~15명 정도로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책임 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정부는 역사에 오래도록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계의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구본경 단장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 연구단

1. 질문의 맥락

우리 과학계는 현재 인구절벽과 의대 선호라는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되던 이공계 인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고령에 다다랐고, 인적자원이 급격하게 부족해지는 선진국형 사회로 너무 단기간에 진입한 탓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❶ 우리나라 과학계의 폐쇄적인 구조

우리나라 과학계는 연구 자원을 선배들이 먼저 독식하는 구조로 디자인되어 있어 글로벌 수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신진 과학자들이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은 한국형 연구 지원 제도라는 완벽한 갈라파고스화를 불러 왔고 국내 과학자도 매년 새로워지는 지원 체계에 어지러움을 느끼는 상황이라, 부족한 인재를 충당하기 위해 해외의 우수한 연구자를 영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외국의 인재들뿐만 아니라 국내 인재들에게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폐쇄적인 연구 평가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국내 풀로만 한정된 평가가 우수 연구자를 덜 우수한 평가자가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내실 있는 평가가 어렵습니다.

연구 제안서 및 평가 시스템의 지나친 국산 갈라파고스화도 한계로 작용합니다. 영문 제안서, 영어를 기반으로 한 제안서 평가가 거의 전무하고 특정 국산 워드프로세서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쥔 시니어들이 공무원과 키워드 중심 탑다운 과제를 제안하여 매년 새로운 개념으로 수백~수천억 원을 운용합니다. 이러한과제 수행 방식도 문제입니다.

국내로 유입되는 신진 연구자들이 신속하게 연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부재합니다. 일단 국내로 들어와 빈 연구실에서 시작해 수년간 연구실을 구축하며 서서히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은 국제 경쟁력을 심각하게 낮춥니다.

여전히 부족한 개인 과제 금액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신진 연구자의 경우 개인 과제 금액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고환율의 영향으로 체감 금액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많은 신진 연구자들이 개인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선배들이 이끄는 집단 과제에 품팔이를 하며 연명하는 실정입니다.

인프라가 부재하고 기기 구매 절차가 복잡합니다. 공유 실험실, 코어 퍼실리티 같은 대학 및 연구소의 공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각 실험실이 파편적으로 운영됩니다. 거의 모든 주요 장비의 가격이 1억 이상인 상황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를 통해 오랜 기간 심사를 받아 기기 구매를 해야 하기에 퀵스타트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연구 지원 체계가 없습니다. 연구비 지원 체계는 있지만, 전 세계의 신진~리더급 인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파격적인 지원 체계는 없습니다.

2. 해결 방안

우리나라의 최상위 신진, 중견, 리더급 과학자를 위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연구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유럽의 ERC(European Research Council) 체제에 버금가는 지원 체계가 시급합니다.

❶ 수월성(Excellence in Science)을 구현하기 위한 인재, 지원, 평가

수월성(Excellence in Science)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재, 지원, 평가의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우수한 인재가 있으며, 해외에서 우수한 인재를 받을 준비도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언제나 위기설이 돌지만 우리나라 또한 유럽의 선진국 못지않은 자본력을 가진 선진국이므로 최상위급 인재에게 언제나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학계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평가'입니다. 우리말 제안서 위주로 단기간에 날림으로 진행하는 평가 방식, 전문성이 부족한 평가단은 21세기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국가의 것임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후진적입니다. 연구 재단의 쇄신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출 수 있으며 수준이 높은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연구 지원 체제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연구단선정평가위원회(SEC) 혹은 ERC(European Research Council) 평가 패널의 운영 방식을 참조하면 우리도 충분히 수월성에 필요한 수준 높은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 기존 연구 재단과는 별개로 작동하는 새로운 재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연구 재단은 보편적인 지원을 하고 새로운 재단은 수월성만을 평가하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어 제안서를 받아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 패널에서 3~6개월간 진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IBS SEC 평가 체계, ERC 평가 체계 참조)
- 바텀업 방식으로, 키워드 없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키워드의 존재는 선발주자(first mover)가 아닙니다.)
- ERC처럼 외국에서 지원서를 내고 평가받은 후에, 호스트 기관을 정한 다음 국내에 들어오면 즉시 연구 착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연간 연구비는 ERC 기준을 능가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해야 합니다. 신진 연구자에게도 한 번에 연간 4~5억 원을 5년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연구자가 최고의 호스트를 찾아갈 수 있도록 호스트 이전에 대한 자유를 부여하고, 해당 연구비에 대해서는 NFEC 심의를 면제하여 신속한 연구 착수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을 위한 핵심 플래그십 연구 지원 체계를 홍보하여 해외 우수 인재 영입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에는 연구 예산이 부족하고 대형 과제 및 특정 분야에만 투자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이민영 선임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1. 질문의 맥락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연구는 예산 삭감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반면, 대형 과제와 특정 분야에는 예산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과학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기초과학은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업이 아닌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❶ 늘어난 기초과학 예산, 줄어든 과제 수

올해 정부는 재작년 대폭 삭감된 기초과학 예산을 늘렸으나 과제 수는 줄였습니다. 특히 '생애 첫 연구'와 '기본 연구'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신진 연구자들의 기초과학 연구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반도체·양자·AI 등의 특정 분야 및 대형 과제에만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이미 국책 연구 등으로 많은 기회가 주어진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전체 연구 생태계를 해치게 됩니다.

❷ 기초과학에는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

당장의 성과가 있는 분야에 투자하면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 많은 성과가 나올지 모르는 기초 분야를 놓치게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저해합니다.

기업은 단기간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기초과학에는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입니다.

2. 해결 방안

기초과학 예산을 늘리고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평가하는 현재의 정량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❶ 대폭 삭감된 기초과학 예산 복구가 최우선

'예산을 매년 크게 늘릴 수는 없어도 줄이는 일은 없도록 관련 법안을 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황정아 의원실에서 R&D 예산 삭감 시 국회의 동의를 받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❷ 연구의 질적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평가 시스템 개선

대형 과제 및 특정 분야에 투자가 쏠리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문 수, 인용 수, 임팩트 팩터와 같은 눈에 보이는 실적이 그 연구의 장기적 영향까지 말해 주지는 못합니다. 정부가 성과를 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초과학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간을 늘리고 연구의 질적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❸ 기초과학 관련 장기 로드맵 마련

최신 기초과학 연구 트렌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공유하여, 어떤 분야가 향후 더 발전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꾸준히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과학기술이며 과학기술의 원천은 국가 과학기술이 아닌가?

강혜랑 정책실장
전국과학기술연구 전문노동조합

1. 질문의 맥락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눈부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수한 인프라가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양자·빅데이터·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현재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뒤처지고 있으며 과거의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홀대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쇠퇴기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등 신흥 공업국가에도 뒤처지는 등,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실입니다. 미래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 그 원천인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❶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국가 과학기술 정책

정부 주도의 국가 과학기술 정책은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는 급격히 변화하므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챗GPT 등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를 국가기관의 연구자가 진행하려고 할 경우 기재부의 예산 편성, 국회의 예산 승인, 과기부의 과제 승인, 평가기관의 평가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예산, 연구 인력이 많이 소비됩니다.

현재의 시스템상 연구자는 연구를 하는 기간보다 연구를 준비하는 기간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연구를 계획한 지 1년 뒤에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 과학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해당 연구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❷ 실패를 두려워하는 국가 과학기술 연구

현재 국가 과학기술 연구는 정부 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계획하고 분야를 특정하여,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분야에는 보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위한 제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성공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연구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패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소수입니다.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상 연구 실패는 퇴출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연구가 도전적이고 창의적이지 않다면,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과학기술의 흐름에서도 뒤처지게 됩니다.

❸ 과학기술계 인력 부족(이공계 기피)

1980년대 이후 국가 과학기술 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큰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정부는 과감한 투자로 신명나는 연구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과학자는 청년 세대의 대표적인 꿈이 되었고 많은 청년들이 이공계 분야의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우수한 과학자들이 다수 육성되어 국가 과학기술기관에 들어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과학기술인 홀대 정책이 줄줄이 시행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국가 과학기술기관의 인건비 통제(총 인건비제도, 연봉제 도입, 임금피크제 시행, 신입 직원 임금 삭감 등)와 복지제도 폐지(정년 단축, 인원 감축, 학자금 폐지, 연월차 폐지, 시간 외 수당 폐지, 국내외 여비 제한, 안식년 제한 등)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홀대 정책으로 인해 국가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이 대거 이탈(대기업, 대학, 해외 기관 등)하였고, 이공계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과학기술기관은 우수한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국가 과학기술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과학기술기관은 일반 기업, 대학, 외국 기업 등에 비해 임금 및 복지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 또한 우수한 인력 유치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 원화 가치는 1년 사이 14.22% 하락했고, KOSPI 시총이 250조 원 증발하는 등 자본시장이 불안정해 우리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시총 100위 기업 중 미국 기업은 60개, 중국 기업은 10개, 영국 기업은 5개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기업은 1개에 불과합니다. 신규 특허 출원인 수와 특허 비중은 2020년 이후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성장 정책 기조 실종으로 우리 경제는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외 리스크 관리가 잘되지 않는 등 경제 위기 대응력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2. 해결 방안

약 3~5년 안에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의 성과를 도출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아 5~10년 정도 사이에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❶ 안정적인 예산 편성 및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국가 과학기술 기관의 경우 각 분야에서 국가 최고의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기관입니다. 해당 연구 분야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편성, 연구 분야 선정에 대한 권한을 기관이 가질 수 있도록 기관의 고유 사업에 대한 묶음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수탁을 축소하고 기관 고유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함으로써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예산, 시간,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과학기술기관 중 하나가 과제 수행을 신청할 경우 현재는 이에 대한 평가 과정이 존재합니다.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피평가자보다 낮은 상황이라면 평가 절차 진행은 불필요합니다. 이러한 예산, 시간, 인력 낭비가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 과학기술기관의 담당 분야는 기관 고유 사업 분야로 지정하고 묶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낭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❷ 도전적인 연구 환경 마련

국가 과학기술기관에 안정적인 예산을 마련하고, 기관이 자율적인 판단 하에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도전적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의 성공·실패에 대한 판단보다는 연구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고위험·창의적 과제를 기획하여 분야별로 편성함으로써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❸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

이공계 출신 박사의 경우 국가 과학기술기관보다는 대기업 및 대학 등 처우가 좋은 곳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수한 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공계 석박사에 지원하는 인원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과학기술계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대기업보다는 낮고 공무원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률만큼의 인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 2024년도 총 인건비 기준 임금인상률은 국가 과학기술계 종사자가 2.5%, 공무원이 3.9%입니다.

국가 과학기술기관에서도 공무원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공무원의 처우 개선 대비 잃어버린 약 30% 정도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교육비·의료비·경조금·퇴직금 삭감, 휴가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제도 폐지, 정년 단축 등에 대한 환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AI 시대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처럼 앞서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김유철 전략부문장
LG AI 연구원

1. 질문의 맥락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의 골든 타임입니다.

❶ AI 분야 최고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 세계의 경쟁

이제 AI는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워졌죠. 실제 AI 분야 최고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정책 흐름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파리에서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가 열렸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여러 국가가 AI 규제 대신, AI 발전과 지원의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을 주도하며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EU도 규제에서 벗어나 AI 분야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주요국들은 AI의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정책을 집중해 왔기 때문이죠. 이러한 흐름만 보더라도 전 세계 국가들이 AI 선점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❷ AI는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저는 AI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가와 기업의 생존,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봅니다.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전기, 통신, 인터넷, 제조업처럼 AI 산업도 새로운 시대의 기간 산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의 변화에 발맞춰 가고, 세계 최고의 AI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2. 해결 방안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을, AI 경쟁력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산업과 경제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미래를 준비하며 AI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AI 모델, AI 기반 경제·행정·국방 등의 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중 하나로 AI-반도체를 선정해 육성하고 있고, 얼마 전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현명하게 협력하고 기술혁신에 집중한다면, 우리나라만의 차별화된 AI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❶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만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여러 응용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AI 엔진 같습니다. AI의 기초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우리 기술력으로 만들 수 없다면, 다른 국가의 기술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AI를 데이터 보안이 매우 중요한 영역인 의료, 국방, 그리고 국민의 정보를 다루는 공공서비스 영역에 적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영역에 다른 국가의 모델로 개발한 AI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중요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국가에서 모델 기술을 차단해 버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❷ 글로벌 인프라 격차, AI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정부는 AI 산업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원천기술 연구, 인재 육성 등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월드 베스트 LLM(Large Language Model, 거대 언어 모델)' 지원 정책은 기업들이 필요로 했던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외부의 변화를 직시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 먼저, 현실적인 인프라 격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고성능 GPU 1.8만 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지만, 이는 미국 xAI의 Grok 3 모델 개발에 투입된 20만 장과 비교하면 약 9%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 최근 글로벌 AI 기술의 발전 방향도 살펴봐야 합니다. AI 모델 개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데이터 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도 데이터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데이터 확보 방법의 트렌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가 스스로 고품질의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강화 학습해 AI 모델의 성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과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을 생각하면, 새로운 연구 트렌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❸ 정부와 기업의 현명한 협력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현명하게 전략을 세우고, 주요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며 우수 협력 사례를 만들어 나갈 때입니다.

-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분야는 바로, 앞에서도 이야기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입니다. 현명한 투자 전략도 필요합니다. 기업은 핵심 AI 기술과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부는 모델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의 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협력 모델에 기반하여 공공성을 가진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다음으로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다양한 응용 사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공공기관들이 대한민국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다양한 영역에서 우수 사례(best practices)를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다양한 응용 사례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AI 생태계가 발전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업과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응용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미세조정(파인튜닝, fine-tuning)과 추론(인퍼런스, inference)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또한 개발된 파운데이션 모델의 API 개방과 접근성 보장을 통해 광범위한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료·행정 분야로도 AI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❹ AI가 스스로 고품질 데이터를 만드는 기술 연구에 집중

마지막으로, AI가 스스로 고품질 데이터를 만드는 기술 연구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이미 반도체, 전자, 자동차, 배터리, 조선, 바이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점 산업 분야에는 이미 많은 현장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축적되어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를 생성하면, 산업현장에 특화된 우리만의 AI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모델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I가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보고서나 자동차 회사의 설계 문서에서 스스로 학습 데이터를 추출하고 확장할 수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산업에 특화된 AI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국가와의 인프라 경쟁에서는 불리하지만, 우리가 가진 양질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왜 정치권이 '나눠 먹기' 식으로 구성하나요?

박성호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1. 질문의 맥락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❶ 여야 대리전의 정파성

저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 3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구해 왔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법 개정에 나선 것도 KBS 이사회와 방문진(MBC)이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언론 현장의 요구에 적극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송 3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방송규제 기구인 방송통신위가 정치적으로 구성된다는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다른 정부 부처들과 달리 방통위가 별도의 법령 아래 합의제 기구로 만들어진 이유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고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두 명, 국회가 세 명(여당 1명, 야당 2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는 이른바 여야 3대 2의 구도는 정치적 후견주의로 변질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의사결정과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에 여야의 대리전이 그대로 반영돼 왔습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방통위에,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공영방송 이사회는 공영방송 사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직적 연쇄가 구축됐습니다.

따라서 방송 3법이 개정된다 해도, 당파에 따라 구성된 방통위원들은 당파적 이익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선 결과에 따라 집권 세력이 방통위원의 다수를 추천하는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야가 뒤바뀔 수도 있고, 방통위원의 임기가 정권의 임기와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상황에서는 여야 구도가 3대 2든 1대 4든 첨예한 정치 공방의 대리전이 방통위에서 벌어지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❷ 방송규제 기구로서 전문성이 필요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규제 기구의 위원을 맡아야 하는데, 여야 진영으로 나뉜 구성은 이를 점점 가로막고 있습니다.

1기 방통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위원장이었습니다. 3~4기에서는 정치인 출신이 2명으로 늘었고, 5기에서는 절반을 넘겼습니다. 전문성보다는 정파적 입장을 잘 관철할 '전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인선이 늘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정치적 배분은 여야 모두에게 기득권을 부여하는 방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기관에서 위원 구성을 개편하자는 논의에 나선다면, 정당은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각 정당이 국민의 대표성이나 민주적 통제라는 이유를 들어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방송규제 기구를 전리품 취급하는 관행을 정당화할 뿐이라는 비판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여야 3대 2 구도의 나눠 먹기 방식을 개선하여 방통위의 정파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❶ 대통령과 여야가 독점하고 있는 위원 추천권을 분산

참여정부 시절 미디어 규제 기구 개편을 앞두고 검토한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위, 선거방송위원회 등의 선임 방식을 차용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차관을 임명하는 독임제 부처가 아닌 만큼 대통령의 위원 추천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❷ 방통위원의 수를 늘리고 결격 사유 확대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위원장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원의 수를 현행 5인에서 9인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안건 의결 시에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 다수결제를 도입하자는 요구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위원의 전문성을 위해 결격 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선출직에서 물러난 지 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지낸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데, 여기에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항목을 더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과거 민주당이 '방통위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자며 제출했던 방통위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어렵다면, 국회에 방통위원의 인사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전문 역량과 적합도를 검증해서 부적격자를 걸러 내는 것입니다. 국회 추천 몫의 경우 지금은 정당에서 추천만 하면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통과시키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하여 검증을 위한 특별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균형은 왜 어려운가요?

김용희 조교수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1. 질문의 맥락

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같은 거대 플랫폼들은 각 영역에서 사실상의 '게이트키퍼'로 자리 잡았으며, 이들은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독점을 바탕으로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경쟁업체를 견제하거나 입점 업체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알고리즘 편향, 자사 우대, 데이터 이용 제한 등 플랫폼 특유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❶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하 '온플법')의 필요성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플법은 공정 경제, 중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익 증진,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네 가지 가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제 철학 중 핵심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과도한 시장 집중과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목할 점은 민주당이 대기업과 해외 기업들의 혁신 역량과 시장 참여 역시 지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대 자본이나 기술 우위를 가진 기업이라도 공정한 규칙을 준수하며 시장에 참가한다면, 투명한 경쟁 질서 속에서 혁신하는 모델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롭다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온플법은 특정 기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에서 모든 기업이 혁신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틀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사업자들은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남용 문제가 대두됩니다.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에서 보듯이, 자율규제만으로는 대형 플랫폼의 불투명한 데이터 활용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온플법은 이러한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한국의 규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국경을 넘어 운영되므로, 한국의 온플법은 구글, 애플,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기업과 국제 디지털 무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균형 잡힌 규제는 공정경쟁을 통해 국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엄격하면 투자를 저해하거나 국제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❷ 온플법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

민주당의 접근법은 대기업·스타트업·해외 기업 모두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되, 시장지배력 남용은 제한하는 '양손잡이'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온플법을 통해 단순히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경제 전반에 공정, 포용, 소비자 역량 강화라는 가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법안 설계와 시행 과정에서 검증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온플법 추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는 규제 강화와 산업 성장 촉진 사이의 균형입니다.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규제해 공정경쟁을 촉진하면서도, 디지털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규제가 너무 약하면 독점적 폐해가 심화하고, 규제가 너무 강하면 투자와 혁신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 공개를 강제하면 투명성은 높아지지만 기업의 영업비밀 노출로 R&D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 글로벌 규제 환경과의 정합성도 중요한 딜레마입니다. EU는 디지털 시장법(DMA)와 디지털 서비스법(DSA)를 통해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더딘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다양한 접근법 속에서 국제 규범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실정에 맞는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 소비자 권익과 플랫폼 자율성 사이의 균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플랫폼에 자율성을 부여하면 다양한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지만,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배달 앱이나 오픈마켓이 검색 순위를 자의적으로 조작하면 소비자가 저품질 상품을 접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과도한 개입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균형점 찾기가 관건입니다.

2. 해결 방안

❶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규율

디지털 플랫폼 규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핵심 방안은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규율입니다. EU, 미국, 중국 등 해외 사례를 꼼꼼히 참고하여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규제 모델'을 도출해야 합니다. EU식 사전 규제 방식은 시장지배 사업자를 명확히 특정하는 효과가 있으나, 획일적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식 사후 규제는 혁신에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규제 속도가 느립니다. 따라서 이들 모델의 장점을 취사선택하고 국내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 빅테크와의 협력 및 무역 관계 관리도 중요합니다. 대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고, 법안 전문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무역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주요국과 집행을 조율하여 중복 규제를 방지하고, 무역 마찰에 대비한 비상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❷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정립 및 중복 규제 방지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정립 및 중복 규제 방지가 중요합니다. 온플법이 공정거래법과 지나치게 중복되면 규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를 다루고 있으므로, 온플법은 플랫폼 특유의 거래 질서와 사전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알고리즘 투명성, 중개수수료 구조, 데이터 이동성 등은 온플법에서 정밀하게 규율하고, 다른 측면은 공정거래법이 다루는 형태가 적절합니다.

-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및 AI 규제 연계가 중요합니다. 데이터 이동성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쉽게 이전할 수 있게 하고, 메시징이나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상호운용성을 의무화하여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독점을 방지해야 합니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알고리즘 투명성, 책임성, 비차별 지침을 통한 AI 감독 프레임워크도 발전시키되, 플랫폼 규제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❸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유연한 규제 방식이 필요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유연한 규제 방식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므로, 탄력적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법률에 세세한 금지 행위를 나열하기보다는 원칙 중심 규정을 두고 세부 사항은 가이드라인으로 보완하는 것이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병행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일정 기간 규제 유예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학습형 규제가 필요합니다.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도 필요합니다. '플랫폼 규제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법률적·기술적 지침을 제공하고, 혁신 기금이나 규제 샌드박스를 구축하여 비즈니스 모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면제나 완화된 조항을 명확히 소통하고, 대형 플랫폼에는 중소기업 사용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공정성 포털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❹ 단계적 도입 및 시장 테스트

우선순위 전략은 단계적 도입 및 시장 테스트입니다.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시행하기보다 초기에는 법적 인프라 구축과 규제 대상 지정에 집중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알고리즘 투명성이나 데이터 이동성과 같은 특정 요구사항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로 먼저 도입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명백히 반경쟁적인 관행부터 우선 규제하고, 복잡한 기술적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는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안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은 효과적인가요?

서형원
전 크로아티아 대사

1. 질문의 맥락

국제경제 통상 질서의 대전환기에 이르러 경제 안보 전략, 조정, 교섭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확립이 절실합니다.

❶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바뀌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는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과제로 대두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 내수시장의 빈약에도 불구하고 세계 자유무역 환경에서 번영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에너지·자원과 기술 공급망의 블록화, 보호무역 강화 등의 국제질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곧 국가 생존과 관련되는 중대한 도전의 시기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산업 공급망의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 강화를 목표로 경제 안전 보장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2년에 발 빠르게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여 경제와 국가안보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❷ 우리나라는 2024년에 공급망 3법을 입법하였으나, 포괄적인 경제 안보 추진 법체계 및 컨트롤타워가 미진한 상황

공급망 3법('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법',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국가 자원 안보 특별법')은 기재부와 산업부가 주축이 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산업 공급망은 경제 안보에서 가장 취약하고 중요한 분야이나, 경제 안보가 포괄하는 범위는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수의 정부 부처들이 각각 경제 안보 대응 조직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산업, 통상, 국제 협력·협상을 포괄하는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민간과의 협력 및 대외 교섭을 추진하는 상위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과거 통상교섭본부 신설 및 이관의 경우처럼, 각 부처가 분장하고 있는 기능들을 종합, 컨트롤하는 정부 조직 신설은 부처 간 주도권·관할권 경쟁으로 인해 쉽지 않습니다. 현 정부 출범 전후 국무총리실에서 검토했던 신흥안보위원회의 설치 건은 무산되었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으나 전문성과 인력의 제한 때문에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해결 방안

가칭 '경제통상안보전략본부'를 설치해야 할 것

❶ 통상과 경제를 국가안보와 연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전담 정부 조직 필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간 주도권 싸움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장관급 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내각관방에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장관)직을 신설해 경제 안전보장 관련 이슈를 통할하고 있습니다.

신설 조직의 인력을 관계 부처 파견자, 관련 기업 및 민간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❷ 경제통상안보는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요소

신설될 가칭 '경제통상안전전략본부'의 경제 통상 안보 전략, 주요 정책 사안들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실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체제에서 결정되고 컨트롤될 것(외교부-외교비서관실, 국방부-국방비서관실 등의 관계를 참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는 해외 부문의 비중이 큰 만큼, 경제 통상 안보가 확보되지 않고는 안정 성장, 즉 '잘사니즘'의 실현이 근저에서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집권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제 통상 안보의 중대성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추진 기구의 필요성을 어필하면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 후 관련 기구 신설에 대한 정부 부처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외교 안보를 둘러싼 정파적 진영 대립, 이대로 가도 좋은가요?

서형원
전 크로아티아 대사

1. 질문의 맥락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한 양극화된 진영 논리의 대립과 갈등은 우리나라의 외교적 역량과 위기 대응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진지한 극복 전략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❶ 우리의 외교 담론 과정의 구조적 후진성과 결함

중요 외교 안보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 사회는 이를 국제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합리적 담론을 전개하기보다는 국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정파적 진영 논리에 쉽게 경도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갈등과 국론 분열도 야기되곤 합니다.

그 예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종북 색깔 논쟁,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친일·반일 프레임 논쟁의 뿌리가 깊습니다. 이는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정책을 펼치고 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이고 강한 외교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협상 기반이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2.3 계엄 사태 이후 진영 논리에 따른 갈등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야당 대표가 집권하면 한미, 한일 관계나 한미·일 협력이 악화된다는 색깔론이 확대 재생산되고, 일부 그룹은 부정선거 음모론의 연장선상에서 미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공작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❷ 정권교체 시 정책 이념과 기조 급변

핵심 외교 안보 정책의 변화가 국민 공감대보다는 진영 논리에 기인하여, 국내 갈등은 물론 일부 국가와의 관계 손상을 초래하곤 합니다. 또한 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보복적 인사나 사법적 처리 때문에 외교 안보 부처 직원들은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고 무사안일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정책 결정과 시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외교 담론 과정의 선진화 추진이 절실하나, 이는 중장기적이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진영 논리의 폐단을 완화 내지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이 현실적이며, 이는 대통령과 외교 안보 팀의 국익 중심 외교 리더십과 합리적 정책 지향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해결 방안

대통령의 초당적 외교 리더십 발휘와 이를 뒷받침할 소통 채널 운영이 필요합니다.

❶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주의 리더십 견지

대통령의 여야 대표 회동 등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 가칭 '전략소통비서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략소통비서관실은 국회·학계·언론·시민단체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과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합리적 외교 담론의 장을 지원하며, 극단적인 진영 논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관계 부처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민감 이슈(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등)에 대한 전문 포럼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❷ 외교 안보에서는 초당적인 소통과 전문가 담론 중시

우리 사회의 외교 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과 극복 의지를 알리면 국민들에게 안심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집권 후 초당적 소통 추진에 대한 주요 정당들의 호응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한 진영 논리와 프레임 논쟁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여서 쉽게 제거될 수 없지만, 현재 민주당 리더십이 국익, 실용, 탄력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고질적인 폐단을 완화 내지 극복할 수 있는 출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이덕행 전 특임교수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전공

1. 질문의 맥락

문제는 중단된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를 찾기 어렵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❶ 남북대화 재개 등 관계

2019년부터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1971년 8월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지금보다 대화가 오래 끊겼던 적은 없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통화가 단절되는 등 남북한 간의 공식·비공식 소통이 끊어졌고, 남북한 상호 방문,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등 모든 분야의 흐름이 막혀 있습니다.

남북관계 중단의 장기화는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서문)한다는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❷ 북한은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두 교전국 관계'선언

북한은 2023년 12월 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남한과의 대화·협력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의 기구를 폐지한 데 이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 등 '통일', '화해', '동족' 개념 등을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과 달리 북한 헌법 전문에 있는 통일 관련 조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 등의 표현)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 및 전술핵무기 개발 가속화, 화성-19형 등의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며 핵 무력 고도화를 대내·대외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대외관계 측면에서는 2024년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어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수물자 지원과 북한군의 파병 등도 진행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북한판 2030 세대('장마당 세대')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민생 지원을 통해 '당의 은덕을 뜨겁게 절감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하는 등 사회주의와 애국에 기반한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여 보면 북한은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체제 공고화 및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내실을 다져 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는 현재의 우선적 관심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해결 방안

북한이 현재의 적대적인 대남정책을 급격히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인 만큼, 우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고 북한에 정책 전환의 명분과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❶ 현재의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실용적인 대북 정책

남북이 1991년 합의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과 북이 별도의 국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편 겨레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서로 도우며 미래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선조들의 희원(希願)이었고 우리 세대에 남겨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의 정책은 한반도 주변 상황 및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동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지향하는 데 있음을 북한에 충분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한의 대결을 조장하고 문제만을 키우는 이념적· 선언적 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을 풀어 가는 데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❷ 남북관계 전환 구상을 꾸준히 북한 및 주변국에 설명해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기적으로 천명하고, 미국 등과 함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남북대화 재개를 계속 촉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북한이 현재 입장을 바꾸어 대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명분과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 및 대화 재개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계기 시마다 꾸준히 천명해야 합니다,
- 남북 협의가 당장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대북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갈등을 빚었던 대북 전단 및 대남 전단 문제, 휴전선 인근에서의 상호 비방 확성기 규제, 남북 항공관제, 드론 규제 등은 당국 간 논의가 긴요한 영역입니다. 시급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 북한의 외교·안보 분야 역량 및 관행 등을 볼 때 북한이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변화를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은 낮으며, 둘 중 하나를 택하여 관계 변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국 등 우방국가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방향과 일정 등을 충분히 조율하는 한편,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❸ 남북관계 침체의 장기화에 대비 필요

남북관계의 침체가 장기화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북미 간 대화 또는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보다 먼저 시작되면 통미봉남(通美封南) 우려 등 우리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 및 통일 한반도의 미래 모습에 대한 객관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내외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는 상호 추동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쪽이 앞설 수는 있으나 결코 따로따로 갈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경제 안보 위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왕휘 교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 질문의 맥락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들은 보호주의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보호주의적 압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안보 위기와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❶ 트럼프 행정부 1기 이후의 보호주의 흐름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후 주요 교역국들은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보호주의를 선택하였습니다. 자국의 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산업·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중국·EU·일본·독일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금기시되었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경쟁국이 자국의 첨단과학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각국이 수출 통제, 수입 금지, 외국인 투자 심사, 사이버 안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상황입니다.

❷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추진 중인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행정부 2기는 1기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국 제조업 부흥과 무역적자 축소는 물론 외교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적대국·경쟁국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한 동맹국·동반국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개발권의 50%를 요구하였습니다.

❸ 보호주의적 압력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내수 대비 수출, 서비스업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아 제조업 수출이 부진하면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60% 이상이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만든 중간재를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급망 교란에 매우 취약합니다.(예: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통제, 2021년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제)

- 특히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미중 관계가 좋을 때는 큰 이익을 보지만 나쁠 때는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 반도체, 중요 광물, 배터리, 전기차(EV) 등의 수출 주력산업에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제재가 중국에 제조 시설을 둔 우리나라 기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경제 안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콘트롤타워 기구를 설립하여 중요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야 합니다.

❶ 경제 안보 전략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콘트롤타워 확립

경제 안보 전략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콘트롤타워를 확립해야 합니다.

- 국가안보실 3차장과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경제 부처와 안보 부처 사이의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대통령 직속 부처간(interagency) 기구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조직을 재편하여 (가칭)경제안보본부를 설립하고 대통령이 매달 (가칭)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관해야 합니다.

❷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요한 첨단산업과 방위산업을 육성·지원

산업통상자원부 13대 주력산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대 국가전략 기술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 이동 수단, 차세대 원자력,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제조, 양자, 바이오헬스, 수소, 우주 항공·조선, 사이버 보안 산업을 지원합니다.

- 반도체: 특별법 제정, 메가 클러스터 조성
- AI: 기본법 이행, 정책금융 기금 프로그램 조성, 스타트업 지원
- 배터리: 수요 침체(속칭 캐즘) 기간에 제조업체에 금융 지원

❸ 소재·부품·장비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합니다. 부당한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는 동맹국 및 우방국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차원의 기술 표준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며, 동맹국·유사 입장국과 해외에서 핵심 광물자원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❹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류 심화·확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사우스와 포용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합니다.

-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이 있으며 경제 규모가 큰 4대 거점 국가(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와의 교류를 우선적으로 심화·확대합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국민의 피해, 그대로 둬야 하나요

전준철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1. 질문의 맥락

국민들은 검찰에게 수사를 부탁하지만, 검찰의 현 상황상 국민들의 사건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❶ 일반 고소 사건 처리에 최소 1년에서 3년이 걸리는 이유

검찰은 법이 정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검찰에 고소를 하면 대부분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내려보내서 수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에서는 간단한 보강수사만 하면 기소가 가능한 사안인데 손도 대지 않고 다시 경찰에 보완 수사를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간단한 보강수사만 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됨에도 최소 6개월가량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검찰로 사건을 떠넘깁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에 고소를 하면 그 처리 기간이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이 걸립니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피의자는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요원해집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한 실체 발견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결론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무능하더라도 경찰에 고소를 했으면 결론이라도 빨리 났을걸' 하고 후회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❷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사실상 공소청으로 운영

검찰에서 처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된 일반 형사사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불송치 의견(불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사건을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해 버립니다. 결국 검찰은 피의자의 얼굴 한 번 대면해 보지 않고 기록만 보고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직접 소환하여 조사를 합니다. 법원은 재판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을 들어 봅니다. 실체적 진실은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거나, 그 과정에서 그들의 말투와 표정 등을 통해 밝혀내는 것입니다. 또한 쌍방의 대질을 통해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만 피의자를 한 번도 대면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 사건에 검찰 인력을 몰아 놓음으로 인한 일반 형사사건 처리인력 부족,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들의 의욕 저하, 검사 및 검찰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부족 등입니다.

과연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현재 검찰은 사실상 경찰이 만들어 온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하지 않는데, 검찰 수사관들은 어떻겠습니까? 실력도 없고, 할 일도 없어 사무실에서 놀고 있는 유휴 인력이 많은 상태입니다.(검사실에서 주 1회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대검 통계를 보면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청에 있는 수사과와 조사과는 일반 수사관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있으나, 여기에 사건이 배당되면 최소 1년에서 3년의 처리 기간이 걸립니다.(수사과와 조사과에서는 2주에 1회 정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 사이에서는 검찰청 수사과와 조사과를 '무혐의 과'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수사력이 떨어져 그곳에 배당된 사건은 모두 무혐의가 되어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수사권을 포기하고 있는 이런 기관에 수사권을 계속 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❸ 검찰의 직접 수사는 고발 사건에 집중

고발 사건은 크게 기관 고발 사건과 일반 고발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관 고발 사건이란 금감원, 감사원, 공정위, 식약청, 국정원 등 정부 기관에서 고발한 사건을 의미하고, 일반 고발 사건이란 그 외 일반인이나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위 고발 사건 중 일반 고발 사건에 대부분의 힘을 쏟고 있는데, 그 고발 사건들은 시민단체나 유튜버, 악성 민원인들이 언론 기사만 가지고 제기하는 던지기식 고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보통 음해성 정치적 성격의 사건들입니다.

검찰은 임용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대부분의 수사력을 이런 정치적 사건에 집중시켜, 정작 악덕 기업이나 사기꾼 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사건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초에는 날카로운 사정의 칼이 되었던 검찰이 정권 후반기가 되면 오히려 정권을 공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해결 방안

현재 검찰은 사실상 공소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❶ 고발 제도 중 기관 고발 사건은 존치

일반 고발 사건의 실태를 보면, 언론 기사만을 근거로 한 고발, 상대당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한 음해성 고발, 경쟁 기업이나 개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무고성 고발 등이 난무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고발 사건에 놀아나면서 수사권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반인 고발 제도는 백해무익하므로 형소법 개정을 통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❷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 검찰은 수사 지휘 및 기소를 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 넘겨주기에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에 있어 검찰보다 더 취약합니다.

검찰의 법률가적 소양과 전문 분야 수사 능력, 경찰의 많은 인력과 기동력 등을 합친 별도의 수사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구성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는 인력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는 인력을 모아 편성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수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감시하고 지휘하는 기능과 기소권만 행사하는 기관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왜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나요?

황의석 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1. 질문의 맥락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Power corrupts.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권력이 집중되고 견제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권력의 남용과 그에 따른 부패가 생기고 그 결과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중요한 이유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이 모두 집중되어 있고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시에는 군인들이 무력으로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사회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벌권은 범죄와 증거를 찾는 등 피의자를 수사하는 권한과 그 수사 결과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면 법원에 기소하는 권한으로 시작되고 재판으로 형벌을 받으면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가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도록 분리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검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❶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독점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논리적으로만 볼 때 검사가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게 되면, 자기가 수사한 결과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함으로써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보다 더 큰 실제적인 문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심지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이를 제멋대로 행사하면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파서 명예를 얻고 사건을 덮어서 부를 얻는다'는 말이 이를 아주 잘 표현해 줍니다.

검찰과 척을 진 사람들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수사 거리도, 기소 거리도 아닌데 언론과 짜고서 일부러 사건을 만들고 심지어 사건을 조작하기까지 하며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극단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반면, 정작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사안은 슬그머니 숨기고 수사하지 않거나 불기소하여 뒷돈을 받거나 승진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❷ 수사·기소 분리의 어려움

우선 수사와 기소의 권한은 법률로 규정된 것이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여러 법률들을 모두 개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여러 의원들이 제안을 했지만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의원들 중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검찰 출신 의원들이 다수 있기도 하고 검찰의 집중적인 로비도 영향을 미쳤으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은 폐해에 대한 자각이나 인식이 부족하여 예전 관행대로 하려는 관성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률을 국회가 통과시킨다고 할 때에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각각 담당할 기관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데 상당한 고통이나 비용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부패 범죄나 마약 범죄, 중요한 경제 범죄에 관한 수사는 검찰이 '거악 척결'을 명분으로 집중해 온 분야이고 때문에 검찰에 상당한 수사 역량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경찰에는 아직 그만한 수사 역량이 성숙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 권한을 제거할 때 수사를 해 오던 검찰의 수사 역량을 효율적으로 살려 범죄 수사에 대한 공백이나 수사의 지연 때문에 도리어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연착륙되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 없이 덤볐다가는 도리어 검찰 및 이와 결탁한 정치세력, 언론들이 또다시 힘을 합쳐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려 할 것이 뻔합니다.

2. 해결 방안

지금의 검찰청 권한에서 수사에 관한 권한을 제거하여 수사와 기소가 기능적으로도 분리하도록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제·개정하는 것, 그 법률로 만들어진 공소청과 중수청이 서로 융합하지도 못하도록 조직적으로도 완전히 분리하는 법률상 장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❶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제·개정

우선적으로는 지금의 검찰청법을 전면 개정하여 수사에 관한 권한을 제거하여 기소에 관한 권한만을 가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중수청법과, 중대범죄에 관한 수사 역량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약칭 '중수청', 미국의 FBI나 마약단속국(DEA) 같은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 기존 검찰의 수사 역량이 합류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중수청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시행하는 것이 일차적입니다. 물론 그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공소청과 중수청이 일란성 쌍둥이가 되어 서로 융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적 교류(채용, 파견 등)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역할이 크지 않은 고등 검찰청의 폐지를 포함해 기존 검찰청의 검사 등의 정원을 대폭 줄이고 중수청으로 이전하는 검사의 정원만 신설하되 기존 검찰청 검사의 정원 감소분보다는 적게 증원하게 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서는 법률의 제·개정이 불가피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서 여러 정당과 의원들 의견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즉 법무부, 행안부, 국무총리 산하 중 어디에 둘지 의견이 가지각색입니다. 또 중수청에 검사를 둘지 말지, 둔다면 영장 청구권을 부여할지 말지 등에 관해서도 의견 차이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완전하게 실현하려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안의 통과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경찰을 비롯하여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을 사건을 억지로 수사하거나, 수사해야 할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도리어 파묻어 버리는 등 수사권을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 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청이 기소하지 않을 사건을 억지로 기소하거나 기소해야 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파묻어 버리는 등 기소권을 남용하는 일도 막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도 상당 부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방안에 관하여 전면적 합의를 구할 때까지 수사와 기소의 기본적인 분리를 뒤로 미루고 그사이 시간이 흐르면서 논란이 계속되면 수사와 기소 분리 자체가 난관에 봉착하고 심지어 실종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새 정부의 임기 초에는 개혁의 1단계로 가급적 의견 차이가 적은 부분 위주로 빨리 공통된 합의안을 도출하여 통과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본 원칙과 뼈대라도 법률로 확정하여 시행하고, 기타 관련된 미합의 쟁점과 포괄적인 개혁방안에 대하여는 개혁 2단계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지는 새 정부의 임기 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 이를 법제화하고 시행하여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신속하게 분할·감축하고, 이를 통해 저항을 줄인 다음 그 외 미합의점과 포괄적인 개혁을 2단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❷ 기존 검찰과 법무부의 분리

이와 동시에 그동안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통제해야 할 법무부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법률 전문가 집단이 없어 걸핏하면 검찰청으로부터 검사들을 파견받으면서 오히려 검찰이 법무부를 통제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기존 검찰청 검사들이 채용이든 파견이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법무부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검찰과는 완전히 독립된 법률 전문가들이 법무부의 전문 인력으로 안착하도록 정부 변호사를 채용하고 이들이 법무부의 전문적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업무에는 공소청과 중수청 등에 대한 감찰과 각종 법안 심사, 타 국가기관에 대한 파견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여석주 전 정책실장
국방부

1. 질문의 맥락

문제는 국군 통수 체계의 취약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입니다. 핵심은 군의 민주적 운영 보장입니다.

❶ 국군의 민주주의 수호를위해 군통수체계의 개혁 필요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 체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 특수부대(방첩사, 특전사, 수도방위사령부 등)가 기존 통수 체계의 감시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12.3 사태에서 군이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또 다른 불법 병력 동원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 문제는 국군 통수 체계의 취약성입니다. 일부 부대들이 기존 군령(작전지휘) 및 군정(행정관리)체계에서 벗어나 대통령과 일부 정치세력의 직접적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핵심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입니다. 국군이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경우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습니다.

❷ 군의 정치적 도구화를 방지하기 위해 군내부 개혁 필요

2024년 12.3 사태를 통해 국군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군이 정치적 개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 과거 사례를 보면, 군의 정치 개입은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군 내부의 감시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❸ 친위쿠데타 가능성 차단 필요

군이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으로 남기 위해서는 친위 쿠데타와 같은 불법적 군사 개입을 방지하는 법적, 제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 첫째, 국군의 헌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적 개입을 시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 둘째, 군 내부의 반헌법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불법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 셋째, 군이 자의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병력을 동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적 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 해결 방안

국군 통수 체계를 정상화하고,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❶ 군통수체계 명확화

현재 국군의 지휘 체계에서 벗어난 일부 부대들을 다시 통제 체계 안으로 포함하고, 군이 정치적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국군 통수체계를 군령과 군정으로 명확히 분리하여, 특정 정치세력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방첩사, 특전사, 수도방위사령부 등 특정 부대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❷ 불법명령을 거부할 법적 근거 필요

현재 군법상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체계로 인해 반헌법적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군 내부의 반헌법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교육 및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군이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내부 고발 및 감찰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증액 압박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정한범 연구위원
미래안보포럼

1. 질문의 맥락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정책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입니다.

❶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한미동맹의 불확실성 증대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거래적 관계로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2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한미 연합 훈련 비용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훈련 중단 혹은 한국의 비용 부담 증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확장억제 전략이 약화될 경우, 한국 내 핵무장론이 다시 대두될 수 있습니다.

❷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우리나라의 역할 변화 요구 예상

미국은 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 미국은 한국의 대중국 견제 역할을 강화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요구하면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 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가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❸ 북미 관계 재설정으로 우리나라의 입지가 변화할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외교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려 할 것입니다.

-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하며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북미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해결 방안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대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균형적 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북미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❶ 한미 방위비 협정의 법적 효력 강조 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법적, 외교적 대응을 통해 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한미 방위비 협정의 법적 효력을 강조하며, 일방적인 협상 변경을 막는 외교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무기 도입 및 군사력 증강을 추진해야 합니다.
- 미국과의 전략적 주고받기(trade-off)를 통해 확장억제 공약을 유지하고, 미국의 대한(對韓)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❷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균형적 외교 추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하는 요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더라도,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긴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강화하여 안보적 마찰을 줄이고, 경제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❸ 북미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협상을 재개할 경우,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한미 간 사전 조율을 통해 우리의 안보 이익이 반영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남북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독자적인 남북 협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방 개혁을 통해 민주적 민군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익명
국방 전문가

1. 질문의 맥락

문제는 12.3 계엄 내란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군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❶ 민주적 민군관계의 중요성

12.3 계엄 사태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권위주의적 군 통제 방식의 잔재를 가지고 있으며, 민주적 민군관계로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미비,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 문민통제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며, 군 내부의 의사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국회와 시민사회의 견제가 부족하여 군이 독립적인 권력 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노출되었습니다.

❷ 군의 의사결정 구조와 한계

현재 군의 의사결정 구조는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군사 작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민통제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습니다.
- 국방부 직속 부대 및 예비역 조직이 본래의 임무에서 벗어나 정치적 이용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 군 내부의 파벌주의와 계급 중심 문화가 개혁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❸ 국제적 민군관계 모델과 우리나라의 비교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선진국에서는 민주적 민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군 내 주요 의사결정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독일은 군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헌법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민통제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민군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민주적 민군관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혁과 군 의사결정 구조 개선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시민사회와 군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국제적 모범 사례를 참고한 국방 개혁 추진이 필요합니다.

❶ 민주적 민군관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혁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 문민통제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 및 주요 국방정책 결정자에 대한 의회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군 내부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을 내면화해야 합니다.
- 국방부 직속 부대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비하여 군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❷ 군 의사결정 구조 개선과 투명성 확보

군 내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 군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국방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 및 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 군 내부 파벌주의 및 계급 중심 문화를 타파하고, 합리적인 인사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❸ 시민사회와 군의 협력 강화

군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시민사회와 군 간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군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예비역 조직과 국방 NGO의 역할을 확대하여, 군의 민주적 개혁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군 내부 교육과정에서 민주적 군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장교 양성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❹ 국제적 모범 사례를 참고한 국방 개혁 추진

군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국제적 모범 사례를 참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의 민주적 민군관계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개혁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 국방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기준을 반영하고 글로벌 안보 환경에 적합한 군사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국제적 협력을 통해 군 개혁을 추진하고, 선진국의 민군관계 발전 모델을 우리 군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지 못할까요?

신정섭 부교수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 질문의 맥락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당이 바로 서야 하며 정당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정당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❶ 청년들이 정치에 입문하기 어려운 이유

청년들이 정치에 입문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정치인도 한 명의 개인이고 경제인입니다. 직업 활동을 해도 경제적 수익이 없다는 것은 해당 직업군에 좋은 자질을 가진 청년들이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정치활동(특히 선출직 출마)은 많은 자원을 소비해야 하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정당 구조의 경직성입니다. 정당마다 서로 다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큰 꿈을 가지고 정당에서 일을 시작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정당 내 조직의 경직성입니다. 많은 청년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정당이 수직적 위계질서가 강하고 폐쇄적인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2. 해결 방안

청년들에게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들이 실제 정당 업무와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❶ 정당 내 청년 정치인 육성책 마련

청년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정당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활용하여 청년 정치인들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정치인들의 선거 출마 등을 위하여 정치자금법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구당을 부활시켜 정치에 입문한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❷ 정당 활동에 청년 정치인 적극 참여

정당은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청년 인재들을 영입하고 교육하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명목뿐인 청년위원회 등을 둘 것이 아니라, 실제 정당 정책을 개발, 발전시키는 과정에 청년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합당한 보수를 주고,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공천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부터 청년들이 정치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당들의 정책 연구소에 정치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고용(시험 혹은 석박사 채용 등)하여, 청년들이 정당의 정책을 연구, 제시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❸ 정치 신인의 상황을 고려한 정치자금법 개정

현재의 '정치자금법'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엔 연간 3억 원,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 5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는 반면, 청년 정치인을 포함한 원외 인사는 선거 120일 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부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으며 선거가 없는 해에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도 선거가 없는 해에 후원회를 조직하여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비 후보 등록 등이 일찍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후원금을 얼마나 주었고 해당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실시간 수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후원금 모금 자체를 막는 것은 정치를 깨끗하게 만드는 조치가 아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후진국형 대형 화재가 잇따르는 건가요?

최영 기자
소방방재신문

1. 질문의 맥락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약 10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를 불러오지 않는 작은 화재가 주를 이루지만 간혹 발생하는 대형 화재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며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평상시 이런 화재 위험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다 가까운 주변에서 큰 화재를 겪게 되거나 뉴스를 볼 때면 그제야 화재 위험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후 대중은 안타깝게 일어난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고는 많은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후진국형 화재 사고 이면에는 관련 제도와 기술 등 수많은 안전 시스템의 실패와 오류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날로 복잡해지고 고밀화되는 공간과 사회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화재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초기에 제어되지 못하고 치명적인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불러오는 이유가 각종 방호정책의 실패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❶ 국가적 화재 방호 체제의 오류

우리나라는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합니다. 소방이라는 공공조직을 통해 화재 사고 시 현장에서의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과 구조 등의 작전 활동도 펼칩니다. 특히 법과 제도 틀 내에서 전문 기술에 기반한 민간 기술자 등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화재 위험 요소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건축물이 법과 제도, 공학적 기술에 따른 자체적인 화재 방호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사안입니다.

화재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요소는 건축법에 따라 구현되는 피난로 확보와 확산 방지 구조입니다. 모든 소방 시스템이 실패하더라도 이 여건만 잘 조성된다면 분명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일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건축 성능에 따른 방호에 실패할 경우 그 보완책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방시설입니다.

이러한 건축과 소방의 유기적인 조화와 원칙 준수는 결국 화재 피해를 경감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형 화재가 이어지는 현실적 문제는 이러한 국가적 화재 방호 체제에 대한 오류를 찾아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❷ 화재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이원화

국가적인 화재 방호 체제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올바르게 시행하고 이를 엄중하게 관리·감독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화재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가 국토교통부라는 건축 관련 부처와 소방청이라는 소방 관련 부처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피난·방화 규정과 소방관련법에 근거한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이 제대로 적용되고 설치·운영되기 위해서는 두 법규의 유기적 조화와 운영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결국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탄생하고 구축된 화재 안전 시설 등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성 행정은 더욱 심화하고 순환 보직 등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재 문제는 화재 안전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결과는 실제 현장과 제도의 괴리로 나타나고 비정상적 제도의 모순 속에서 기형적 산업 구조까지 만들면서 결국 반복되는 화재 피해의 근원은 해결하지 못한 채 무한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문제, 의지 부족으로 개선되지 못한 문제들은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화재 안전에 취약한 무분별한 건축 재료 사용과 인허가 과정에서의 오류, 사후 관리의 미비 등 다양한 문제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 때에만 반짝하는 대중의 관심과 서둘러 내놓기 바쁜 정부의 안전 대책도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화재 안전 정책과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운용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 부처의 기존 업무 영역 또는 권한을 떠나 실제 작동하는 화재 안전 제도 등의 체계로 탈바꿈하기 위한 관련 법규 운용 체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화재 안전 법규 이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화재 예방 행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법규의 원칙을 지켜질 수 있는 화재 안전 기술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기술과 산업의 구조 등 관련 제도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❶ 화재 방호를 위한 건축·소방 제도의 조정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한 구조와 마감 재료, 내화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련법에서는 스프링클러나 경보 설비 등 각종 소방 안전시설을 규제합니다. 하지만 화재 안전을 위한 건축 구조와 소방시설 등은 상호 유기적인 기술적 융화를 통한 종합적 성능과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아무리 소방시설이 잘 구축되더라도 건축 구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없고 그 반대일 경우 역시 화재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건축 분야에서 규정한 피난·방화 시스템은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사용 등의 단계에서 세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추후 변경 또는 취약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지 못합니다.

소방법 테두리 내에 속한 분야에서 건축 구조의 피난·방화시설을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의무가 일부 부여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자들에게는 마땅한 권한과 책임도 없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 정비를 통해 건축물의 피난 방화 규정과 소방 안전 규제를 통합하거나 화재 안전 관련 조항을 일관되게 정비해 설계와 시공, 사용(관리) 등 건축물 생애주기별 화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❷ 후퇴하는 소방예방 행정의 정상화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형 화재 사고에선 언제나 소방 예방 행정의 부실이 드러납니다. 소방이 현장 조사를 나갔지만, 위험을 알아채지 못했다거나 민간에서 이뤄진 소방시설 점검이 부실했다는 내용 등은 사고 뒤 단골 뉴스가 된 지 오래입니다.

- 2024년 일어난 두 건의 대형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에서는 법규에 따라 객실에 설치된 간이 완강기가 층수와 길이가 맞지 않은 채로 방치됐고 어떤 객실에는 아예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사고 역시 소방시설의 불량 방치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며 후퇴한 소방 예방 행정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와 소방 대상물의 인허가, 소방시설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건축 허가 동의 이후 성능 유지를 위한 소방시설 관리 등 모든 프로세스가 바로 소방 예방 행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즉 화재 시 필수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총체적 안정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 조직 내에서 예방 업무는 기피 보직이 돼 버린 지 오래입니다. 대민 업무에 더해 자칫 오류나 실수라도 생기면 악성 민원은 물론 신분에도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전문성 배양을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과 인사고과 미흡 등은 예방 행정의 체계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소방 대상물을 전수 검사하고 관리하던 소방 검사 제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정 대상물을 집중 조사하는 '소방 특별 조사'(현 '화재 안전 조사')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소방 대상물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 관리와 감독 체계가 더욱 느슨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 2025년 2월 14일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고 역시 그 이면을 보면 부실한 소방시설 공사 감리가 이뤄졌음에도 현장에 나가지도 않은 채 소방시설 완공 검사를 완료해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을 나갈 수 있는 대상물임에도 소방은 현장을 보지 않고 서류만으로 허가를 내 준 겁니다. 이렇듯 소방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피하는 소방의 소극적 예방 행정은 국민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 따라서 소방시설의 설치와 공사, 감리, 관리 등 전반적인 소방 예방 행정 프로세스 내 현장 확인 및 기술 검토 등의 의무 강화 방안을 마련해 소방 예방 행정의 기반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 행정의 체계화를 위한 전문성과 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면 예방 전문 소방공무원의 인력을 증원하거나 전문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해 소방시설의 정상 허가와 운영을 위한 관련 기술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현장 투입으로 소방 조사 또는 완공 검사 과정의 실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❸ 화재안전 기술과 산업의 정상화

소방 안전을 위한 화재 안전 기술은 소방관련법에 따라 소방용품의 제조와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건축물의 준공 이후에는 소방시설의 관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세스별 기능을 구현해야 하는 산업의 구조는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소방 조직 및 행정과 민간 기술 영역의 부조화입니다. 소방 대상물의 건전성은 기술에서 시작되지만, 소방공무원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성 축적을 제한하는 순환식 공무원 보직 체계와 계급 그리고 기피 직무라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더 많은 민간 소방 기술자를 양성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속에서 그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소방 기술 계통 산업 구조는 기술인들이 각각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사라진 소방 검사의 공백을 소방시설 관리 업체가 메우고 소방의 인허가 중 가장 핵심 단계인 소방 공사 감리 결과를 보고서만으로 갈음하는 현행 소방 예방 행정 체계 등 산적한 문제는 '책임을 회피하는 소방 조직'과 '책임과 권한, 지위가 부여되지 못한 기형적 소방 기술계'라는 문제로 결부됩니다. 공권력을 가진 '관'과 기술력을 가진 '민'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지켜져야 할 화재 안전이 그저 먼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소방 기술 영역이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선 건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소방 기술자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위치에서 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들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무한적인 경쟁 방치로 기술의 저급화를 부추기기보단 적정한 대가를 받아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 논리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소방 공사 감리와 소방시설 점검 등 소방 예방 행정의 사각을 해소할 수 있게 하려면 최우선으로 소방 기술의 관한 엔지니어링 발주 과정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이를 테스트베드로 삼아,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법상의 온라인 공청회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❹ 소방의 화재 조사 체계 강화와 정보 공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규모, 발화 원인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현행 체계에 더해 화재 피해의 확산 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화재 조사 및 감식 체계는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경찰 등은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국과수는 발화 원인 등을 중점 조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소방의 경우 발화 원인부터 피해 규모,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규명해 화재 더 나은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가 확산된 원인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이를 공표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노력 또한 미흡합니다.

- 예를 들어 화재 발생 대상물에서 피해가 커졌다면 대상물의 화재 취약성은 건축 구조적 측면에서 무엇이며 어떤 조건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약 소방 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미작동 배경이 인위적 문제인지, 기계적 결함인지 등만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용된 화재 방호 시스템과 용품 등은 어떤 형태였고 만약 결함이 있었다면 이 사유 또한 밝혀내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방화시스템 자체의 내구성 또는 건전성, 유지관리 실태 등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소방용품의 성능 수준을 높이는 등의 법규 개선으로 연결되고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화재 조사 결과는 경찰 관여 시 수사 중이라는 이유 또는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 등을 이유로 정확한 정보조차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화재 조사 체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 영역의 다양한 프로세스별(용품 제조, 설계, 공사, 감리, 관리 등) 전문 기관을 함께 조사에 투입하거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의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화재 원인을 밝히는 조사로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를 반영해 유사 대상물의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피해 확대 요인 분석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 또 다른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❺ 화재 안전 법규 운용 체계 정비

우선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의 화재 안전 법규 운용 체계 정비를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처 권한이나 법규 운영 체계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화재 안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제도 주무 부처를 조정해야 합니다.

후퇴하는 소방의 예방 행정은 즉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소방의 화재 안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회피 현상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소방의 본질적 가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소방의 예방 행정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대 또는 전문 기관 설립·지정 등 현실적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과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건전한 기술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민간 기술계에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소방의 화재 조사 과정의 정밀성을 강화하고 관련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전파해 사고 사례 학습을 통한 안전 의식 함양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서치원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1. 질문의 맥락

❶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공고화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과점 상황을 이용해 앱 개발사, 이용 사업자 등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독점계약을 강요하고 IT 스타트업이나 중·소상공인의 시장진입을 봉쇄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비용은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데이터 독점을 토대로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시민의 의사결정 구조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❷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

규제 반대론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현장에 있는 시장참여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고려 없이 관념적으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시장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토종 플랫폼만 역차별을 당한다고 반대하던 이들이, 최근에는 토종 플랫폼뿐만 아니라 해외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이 되면 통상마찰이 우려된다고 반대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자국우선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예측 불가능하기에 해외 플랫폼을 규제 공백 분야로 남겨 둔다고 해도 통상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해결 방안

온라인 플랫폼의 자연독점화 경향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약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수많은 독과점 폐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입법이 필요합니다. 자율 규제를 통해 독과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역사적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❶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한 규제

EU,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지정 방식의 강한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호주, 인도 등에서도 논의가 활발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급속히 전개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정책과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규제의 목적에 따라 관련 법을 '온라인 플랫폼 반독점법'과 '거래공정화법(소위 '온플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독점력 남용의 폐해를 막아 공정한 시장경쟁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후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려는 것입니다. 반독점법의 방식으로는 사전 지정 방식과 사후 추정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비교법적으로 사후 추정 방식을 온라인 플랫폼 규제책으로 도입한 예는 없습니다. 사전 지정 방식은 수범자를 예측 가능하며 위법성 판단이 명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온플법의 통제 분야는 절차적 통제와 내용적 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차적 통제는 가능하면 넓게 적용하는 추세이고, 내용적 통제는 각국이 자국의 사정에 맞게 설계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❷ 시장경쟁의 공정성을 바로잡고 개별 불공정거래행위를 봉쇄

21대 국회에서 거래공정화법이 정부안을 바탕으로 상당한 논의의 진전을 보였으나 부처 간 알력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반독점법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으나 22대 국회에서 초창기부터 많은 법안이 발의됨으로써 본격적 논의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국면을 맞아 어느 법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소상공인의 플랫폼 거래 의존도 및 종속성, 플랫폼의 이윤 압착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시장경쟁의 공정성을 바로잡고 개별 불공정거래행위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작동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이 법안에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 해결, 합리적 정산 기간 설정, 거래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 보장 등의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불법·위법 주주총회, 해법은 없을까요?

윤태준 연구소장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1. 질문의 맥락

사측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위법 행위로 주총에서의 표결 결과가 뒤바뀌는 일이 지금도 빈번합니다.

❶ 불법주주총회의 문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소수 주주 과반 결의제(MoM, Majority of Minority) 등의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회사가 주주들의 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안건이 가결될 수 없습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20~30%를 밑도는 가운데 초다수결의제 등 소액주주의 권리가 심히 침해되는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경우,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❷ 주주총회 의장의 막강한 권한

상법 제366조의2는 질서 유지 목적하에 주주총회의 의장에게 의사 정리, 참여 주주에 대한 퇴장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의장은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주주들의 발언을 언제든 중지시키고 해당 주주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으며, 주주들의 반발을 뒤로한 채 주주총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특정 안건의 가결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❸ 회사 고용 인력으로만 진행되는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이 막강한 가운데,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총 전반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주주총회는 회사 임직원 및 회사로부터 고용된 법무법인, 의결권 수거 업체, 관련 자문사 등의 인력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특히 일반주주와 경영진 간에 표 대결이 벌어지는 경우, 사측이 고용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주총에서의 편법·불법·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자문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등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에게는 해당 행위가 주요한 매출 창출 행위이기에, 주총 현장에서의 비효율성 및 관련 업무의 어려움만을 강조하며 주총을 감독하는 제도의 도입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해결 방안

주주들의 의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최종 표결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❶ 전자투표 의무화

공신력 있는 업체에 의해 집계되는 전자투표의 경우, 사측에 의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의무화는 불법 주총 근절을 위한 첩경입니다.

단, 현재 전자투표 참여자들의 투표 내역은 회사 측에만 공유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은 주총이 끝나도 전자투표에 얼마나 많은 주주들이 참가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안건별로 전자투표 참여자들의 표결 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공개 시점은 주총 시작 시점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❷ 위임장 제도 보완

이유조차 명확히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주총 당일 특정 주주들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회사는 자신들이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한 연유를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에서는 그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전에 회사와 주주들 간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전자 위임장과 관련된 기술적 문의 사항 등)을 주총 당일에 갑자기 문제 삼아 의결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주총 검사인 제도를 보완하고, 필요시 주주들의 '주총의장 선임 청구권'을 보장하여 상장사 주총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❶ 개표현장 감시인력 배정

주총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검사인 1인이 모두 감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장시간 진행되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개표 작업의 경우, 해당 작업만을 감시·감독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인력은 개표실에서 사측 인원들의 개표 작업을 실시간으로 지켜 보고 기록하여, 검사인이 충실한 검사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❷ 독립적인 의장선임 청구 제도

결국, 주주총회에서 한정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의장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366조의 2에 의거하여 대다수의 기업들은 정관을 통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장을 맡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한 주총 진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들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상법 제367조를 준용하면 될 것이기에, 입법 난이도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단, 주총 의장의 막강한 권한을 고려할 때 주총 의장 선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검사인 선임 시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법상 '주요주주'의 요건에 준하는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의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물류 마진 폭리 문제를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요?

정종열 자문위원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1. 질문의 맥락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의 물류 폭리 문제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❶ 원부자재 가격 합리화는 가맹점주 생존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

과도한 원부자재 가격은 가맹점주의 수익률을 저하시켜 생존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다. 현재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과도한 원부자재 마진이 상당 부분 가맹점주에게 주어져야 가맹점주가 최소한의 수익을 내고 생존해 나갈 수 있습니다.

❷ 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불균형이 산업의 발전을 저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형 가치를 기반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기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맹점주의 힘이 너무 약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손쉽게 유통 폭리를 취하는 문제로 인해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유통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다음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❸ 온라인·모바일 시대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

가맹본부가 현재와 같이 물류 마진 폭리를 통해 물류 마진 중심의 수익 구조를 고수할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무형 가치를 중심으로 경제적 공동운명체를 형성하여 공존한다는 본질을 벗어나 공존이 필수적 요소가 아닌 유통업의 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물류 경쟁력이 가장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에 산업 전체가 종속되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가맹점주에게 행하는 부당한 필수 품목 구입 강제를 금지하여, 필수 품목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아야 합니다.

❶ 필수 품목에 대한 기준을 정비해서 과도한 필수 품목 지정 방지

필수 품목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엄격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필수 품목의 범위를 좁혀,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막아야 합니다.

- 현재 가맹본부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이나 농·수·축산물에 본사 로고만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심지어 로고조차 부착하지 않은 저품질의 물품을 시중가보다 훨씬 고가로 공급합니다. 필수 품목이라는 명목으로 거래 상대방을 구속함으로써 물류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 필수 품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필수 품목의 범위를 대폭 줄이고, 이러한 물품을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하는 관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❷ 필수 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금지

현재 필수 품목의 가격은 가맹본부가 통보만 하면 횟수나 인상 폭에 대한 제한 없이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엄선된 필수 품목의 가격 인상 폭과 횟수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필수품목 가격 인상 시 물가 인상 등에 의한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할 경우 가맹점주(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이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주체가 되고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견제를 할 수 있으려면 단체를 구성하고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필수 품목 지정이나 가격 인상 및 변경에 대해, 가맹점주 개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의견에 반대를 표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 단체가 있는 경우 단체와 협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 특히 필수 품목을 줄이고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속성인 가맹본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견제를 통해서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데, 제도를 개선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한 축인 가맹점주들에게 협상력을 부여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❹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를 로열티 기반 수익 구조로 전환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가맹본부의 물류 폭리를 줄여 프랜차이즈 산업을 무형 가치 산업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수익 구조를 물류(유통) 마진 방식에서 로열티 방식으로 변경할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진정한 경제적 공동운명체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K-콘텐츠를 만드는 방송 노동자에게는 왜 노동권이 없나요?

김영민 센터장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1. 질문의 맥락

K-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러한 콘텐츠 산업을 '새로운 미래의 경제성장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종사자들의 노동권은 열악합니다. 일이 좋아서 뛰어들지만, 젊을 때 몸을 갈아 넣다가 일찍 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출생으로 국가 소멸까지 걱정하는 시대에 사람을 갈아 넣어서 유지하는 산업은 지속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❶ 당연하게 여겨지는 장시간 노동

방송산업에서 장시간의 노동은 아주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드라마 촬영장의 경우 촬영 준비와 정리 시간을 제외하고도 52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일정을 짭니다. 과거만큼 살인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밤샘 촬영과 야간 촬영이 빈번하고, 초과 촬영에 대한 요구도 잦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작가나 연출 직군, 의상·미술·분장 직군은 항상 노동하는 상태에 놓이고는 합니다. 일례로 최근 예능 방송작가의 노동시간은 평균 54시간으로 나타났고, 휴일은 일주일에 1.5일에 불과했습니다.

❷ 당연하게 여겨지는 고용불안

방송 분야에서는 고용불안 또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수개월 동안만 계약을 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방송미디어 산업 종사자들은 지금 하는 일이 끝나면 다음 일을 또 언제 하게 될지 몰라 막막한 나날을 보내는데, 이러한 생계 불안을 겪는 이들이 많음에도 실업급여와 같은 안전망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❸ 외주제작의 확산과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한 노동 파편화

2016년 이한빛 PD의 죽음으로 카메라 뒤의 노동 실태가 드러나면서 나아진 부분도 적지 않지만, 코로나19와 OTT의 등장으로 우리나라의 방송미디어 산업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외주제작이 확산되고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노동은 더욱 파편화되었고, 제도를 우회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더는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❹ 잘못된 계약 관행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고, 계약서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에 따라 일을 하다 보면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일을 겪어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문서 제목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K-콘텐츠를 만드는 방송 노동자의 노동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 당국은 팀원급 스태프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지만, 실제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등을 진행하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도 고질적입니다. 방송계 종사자 대다수는 본인이 프리랜서여서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사용자 측은 이들이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사용자 부담분을 내지 않기 위해서,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합니다.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일반 근로자에 비해 두 배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육아휴직 제도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산업재해를 당해도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측이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것에 대해 담당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은 수동적으로 대응할 뿐입니다.
- 노동법과 사회보험이라는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의 기저에는 불안정한 산업구조와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업계의 분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 방송되기 전까지는 콘텐츠의 성패를 알 수 없는 방송산업의 특성상, 방송사는 높은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아래로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는 외주제작의 활성화와 턴키계약의 보편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OTT의 등장 이후, 방송사마저 OTT의 외주제작사로 전락하면서 먹이 사슬이 더욱 위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 방송계는 업계인들이 '원래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노동법 지켜 가면서 방송 못 만든다'는 말을 흔하게 할 정도로 사회 보편의 상식과 심각하게 동떨어진 관행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방송미디어 영역의 내부 문제를 자신의 치부로 생각하여 소극적으로 다루는 방송과 언론도 한 몫을 했습니다.

2. 해결 방안

무엇보다도 노동자성을 둘러싸고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회색 지대에 노동 당국이 적극 개입하여 노동법의 적용 범위가 좁아지거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인 판단과 개입을 통해서 노동법을 적용해 노동자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침과 절차를 수정해야 합니다.

❶ 현실적인 노동자성 입증

현재는 노동자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전에 유사한 사건에서 근로 감독 사례나 관련 판례가 축적되어 있더라도 노동자성을 사건마다 처음부터 다시 입증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갈등 상황을 예상하고 모든 증거를 남겨 두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조사 절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력을 이미 제공하였는데 임금을 받아내는 과정이 법적으로 온당하게 보장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인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 우선 가짜 3.3%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탈세를 잡아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건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과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이는 그저 세금 신고 착오에 그치지 않고 사회보험료의 탈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노동자성과 관련한 적극적인 판단이 이뤄지도록 노동 행정 과정에 대한 절차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성 판단이 가장 자주 필요한 업종 중 하나인 방송미디어 산업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유사 사건과 판례 등에 기초하여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단순 회피, 사건 처리 지연, 민사 절차 종용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 문화산업과 관련한 수많은 형태의 정부 지원사업 진행 시에 노동법 준수와 노동권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의뢰를 받아 용역계약을 맺어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문화산업 완성 보증 등의 금융 지원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조항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❷ 정체불명의 프리랜서 계약 근절

사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정체불명의 프리랜서 계약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 산업계에서는 어느 법률에도 없는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도급계약과 위임계약 형식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서 근로계약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호한 형태의 계약을 이대로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을 통해 적극적인 노동 행정을 펼쳐 올바른 관행이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방송미디어 산업 특성과 노동 실태를 이해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분야별 근로 감독 등을 통해서 산업 내의 노동을 규율하는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노동자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계약서 미작성이나 서면 계약서 미교부, 계약기간의 불명확한 명시 등 계약서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과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이에 대해 각각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 아울러 노동자성 부정의 증거로 악용되는 표준계약서를 방송미디어 산업 특성을 고려한 근로계약서 형식의 표준계약서로 개정해야 합니다. 가령 출퇴근 시간은 명시하지 않더라도, 함께 일하기 위한 근로시간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고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사전 승인을 듯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방송의 특수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말은, 근로계약의 일반적 성격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특수하지 않은 업종과 직종은 없습니다. 방송미디어 분야에도 당연히 노동법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❸ 제작사의 책임감 있는 경영

방송미디어 산업의 제작사가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현재 방송미디어 산업에서 경영자로서의 책임과 역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계약해도 언제든지 자를 수 있고 노동권 박탈을 무기로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상시 대기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효율적이고 모호한 업무 지시와 관리를 하여도 별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지점은 프로그램 제작이 실패하거나 적자가 발생하면 임금 체불을 통해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권 침해가 허용된다는 것은 경쟁의 규칙을 어긴 경영이 용인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권 보장은 노-사 간의 제로섬 게임이라는 인식을 넘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 경영 능력이 없는 제작자가 난립하는 현상을 제어해야 합니다.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 노무 관리나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제작자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산업 내의 과당 경쟁을 방치하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당장의 경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 회사 간 계약에 대한 관행 자체도 바뀌어야 합니다. 가령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계약이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 편성이 되었다거나 투자나 광고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지불 여력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다가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가 왜 필요할까요?

정유훈 수석전문위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

1. 질문의 맥락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자율성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❶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한계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은 수도권으로의 집중, 저출생 고령화, 다양해진 주민 수요 등의 사회변화 대응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구분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지역 실정이 반영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이 부여되고, 의정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되는 등 지방의회에 일부 자율성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❷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강화

정책지원관이 신설되었으나, 정책지원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한 수준입니다.

❸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명확화를 위해 겸직 금지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윤리특위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위험합니다. 다시 부모들이 아침마다 도시락 싸는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정호 정책실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 질문의 맥락

❶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무상급식 안착

2011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편적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시도했다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못 해 보고 자진사퇴했습니다. 그 이후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국가 제도는 부모의 역할을 일부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K-급식은 안전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으로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❷ 고강도, 고위험, 저임금 급식 노동의 위기가 친환경 무상급식의 위기로

최근 급식 노동이 무너지면서 질 좋은 무상급식의 미래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의 유치원과 학교에 안착하는 동안,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잠복기 10년이 함께 지나가면서 직업암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말 기준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승인 건만 143건에 이릅니다.)

- 집단 급식의 일부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조리흄이라는 유해 발암물질이 고강도, 압축 노동과 맞물려 폐암을 유발합니다.
- 특히 학교급식실은 환기 시설 노후화 문제뿐만 아니라 고질적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리흄을 유발하는 조리 빈도가 높아지고, 호흡이 가빠지게 되면서 폐암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현재 학교급식실은 병원, 공공기관, 심지어 군대 급식소보다 환경이 더 열악합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1인당 평균 식수 인원은 146명으로, 이는 군대급식 종사자보다 2~3배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의 약 6만 명에 이르는 조리사, 조리 실무사 대부분이 방학 기간 두 달여간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로, 이들은 일상적 임금 불평등을 겪으며 방학마다 보릿고개를 보내고 있습니다.

- 고위험 노동·저임금 노동 문제가 겹치면서 학교급식실 일자리 경쟁력이 떨어져, 신규 채용률이 떨어지고 조기 퇴사자가 늘어나면서 급식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2024년 상·하반기 신규 채용 미달률이 평균 30% 이상인 지역이 서울, 경기, 세종, 제주, 충남, 충북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 인력 기준이 원래 팍팍한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 신규 채용이 되지 않고 조기 퇴사가 늘어나다 보니, 결국 남아 있는 노동자들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며 일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반찬 가짓수가 줄어 부실 급식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❸ 학교급식실 위기의 심각성 인지 부족

학교급식실 위기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알리기가 어렵습니다. 급식 노동자들은 책임감과 엄마의 마음으로 어쨌든 그날그날 밥을 해 냅니다. 외부에서는 일단 급식만 나오면 내부의 고충을 잘 헤아리지 않습니다.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반찬이 부실해져야 급식실을 들여다보는데, 노동자들에게 파업은 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❹ 교육부 및 교육청의 소극적 태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부라고 하면서도 정작 예산 편성에는 소극적입니다. 학교급식실의 인력 기준이 왜 높은지, 왜 지역마다 천차만별인지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교육 당국 관계자가 없습니다. 인력 충원과 임금인상 요구는 노사관계, 교육자치의 문제로 넘깁니다. 현재의 교육부에는 학교급식 종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해결 방안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중앙정부의 리더십으로 노사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❶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의 질과 위생만 규정합니다. 이를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 교육 단체의 큰 반발이 없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을 재발의하고 2025년 상반기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령에 급식실 인력 기준을 마련해, 2026년 신규 채용 예산과 기준에 반영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 중이고, 추가로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준비 중입니다.)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의 최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을 정부가 마련할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 교육청은 정부의 기준을 최저 기준으로 두고 점진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가야 합니다.
- 부족한 급식 인력에 대한 충원을 요구하면 교육 당국은 예산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한 데 반해 조리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 기준에 따라 학생 수에 맞춰 조리 인력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교육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예산을 어디에 우선 사용할 것인가는 정치와 결단의 영역입니다. 학교급식실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❷ 학교급식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 개선

합리적 직무 가치 평가를 통해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처우 차별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공무원과의 임금 격차 문제를 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풀어야 합니다. 노사 교섭의 영역으로만 맡겨 두면 매년 파업이 반복됩니다.
- 공정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는 3년째 공정한 직무 가치 평가 연구와 임금체계 협의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공무직위원회를 신설하여 노·사 전문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결론 내지 못한 공무직위원회를 재가동해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전문가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학교 비정규직 집단 교섭에서 승인하도록 합니다.

어렵게 독립영화를 만들어서 더 어렵게 극장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감독들도 마찬가집니다. 영화 정책은 독립영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원한다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승환 관장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1. 질문의 맥락

독립영화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상업영화가 다루지 못하는 사회적, 예술적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영화에서 발굴된 창작자는 영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작품이 매년 두세 편은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비평적 인정이 대중의 관심과 관람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작품의 문제를 넘어, 독립영화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창작 환경 유지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독립영화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독립영화가 관객과 만날 기회가 부족하다면 그 지원의 실효성은 의문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❶ 특정 멀티플렉스 상영 업자가 극장 매출액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상영 시장의 독과점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이 운영되긴 하지만, 전체 스크린 대비 상영 수가 적고 그나마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줄어들고 있어 관객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말보다는 관객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평일 상영이 많으며, 대부분 하루에 1회 상영되고, 상영시간이 비주류 시간대에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편성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관심이 있는 관객조차도 관람을 포기하게 만드는 한계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독립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은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관객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❷ 독립영화는 마케팅 및 홍보도 충분히 하기 어려운 상황

대형 배급사가 배급하는 상업영화는 막대한 마케팅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만, 독립영화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작비도 어렵게 조달하는 상황이므로 배급과 홍보마케팅을 할 비용은 더더욱 조달이 어렵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통해 지원을 받더라도 폭넓은 관객에게 영화의 상영 정보를 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독립영화는 GV(관객과의 대화) 행사나 예매 또는 관람 시 기념품(굿즈)을 증정하는 것으로 마케팅하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홍보합니다. 하지만 이런 홍보는 도달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객들은 독립영화의 존재를 알기 어려우며, 영화의 개봉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언제 상영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영화 상영 정보를 알아내더라도 하루 1회인 상영시간과 내 일정이 맞지 않으면 관람할 수 없습니다.

2. 해결 방안

제작과 배급, 영화제 등에 해 온 기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객에 대한 지원도 늘려 가야 합니다. 관객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의 구조적인 지원, 관객에게 영화 선택과 감상의 기회를 보장하는 직접적인 지원을 확충해야 하며 관객 정책을 펼쳐 나갈 행정 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❶ 관객이 독립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구조적 지원 필요

어렵게 독립영화 상영 기회를 만들어도 관객이 없으면 되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상영 기회와 홍보마케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객이 독립영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은 관객층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기본적으로는 극장에서 독립영화의 안정적인 상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영 기회를 확보해야 하고, 독립영화와 관심 있는 관객이 매칭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AI 등의 새로운 기술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독립영화의 부족한 상영 기회와 어려운 홍보마케팅에 관한 이야기는 자주 언급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만, 폭넓은 관객층이 독립영화를 선택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 또한 부족합니다.
- 독립영화 제작 편수와 배급 편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관객은 이와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극장에서 안정적인 상영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관객이 필요합니다. 독립영화 지원의 초점을 제작에만 맞추지 말고 배급과 상영, 그리고 관객 개발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지원으로 바꿔 가야 합니다.

❷ 관객에 대한 직접적 지원 확충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설치한 영화발전기금은 주로 관객이 내는 입장료의 부과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는 관객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관객은 기금 조성의 당사자임에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과거에는 영화발전기금으로 영화가 제작되거나 배급되어 관객에게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갔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관객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소수의 사업자가 수요를 독과점하고 있는 만큼 관객의 영화 선택과 관람의 다양성 보장,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향유권 보장, 그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의 영화 감상권 보장 등을 위해 공공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 이와 함께 관객이 어디서 어떤 영화를 어떻게 선택해서 감상하는지, 감상 이후 영화가 개인의 발전과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영화 감상이 어떤 사회적·문화적 영향으로 이어지는지 등 관객에 대한 질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❸ 영화·영상물 관련법의 재·개정 및 리터러시 관련 기구 설립

영화비디오법을 개정하고, 관객 정책을 펼쳐 나갈 행정 기구를 만들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 법률 개정 방법으로는 영화비디오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독서문화진흥법'처럼 (가칭)'영화·영상물의 리터러시를 위한 법률' 등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을 통해 국민이 영화·영상·방송·온라인 비디오 등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건전한 영상문화를 만들어 가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영화비디오법에 의해 설립된 기존의 영화진흥위원회가 아니라 영화·영상물 감상 확산과 리터러시를 위한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여 모든 국민이 영화·영상 콘텐츠 리터러시 습득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역, 학교, 직장 등에 영상 콘텐츠 리터러시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장애인, 고령자 등이 충분한 영상 콘텐츠 감상과 리터러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합니다.

공익 직불금 제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강마야 연구위원
충남연구원

1. 질문의 맥락

문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우리 사회가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 수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수준으로 보상, 지지할 것인가'입니다.

❶ 공익 직불금 제도의 중요성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익 기능은 '식량주권의 확보, 농민들의 소득 안전망 구축, 생태계 다양성 증진을 통한 환경보호,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및 농촌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의 보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적극 개입해야 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강력한 수단이 바로 '공익 직불금 제도'인 것입니다.

농민의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마음 편히 농사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는 농민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농사 방식은 생태계 다양성을 증진시키면서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 모든 자원들이 조화롭게 공존해야만 농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촌 지역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공익 기능 수행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하고 지지해서 이들의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농업 농촌 공익 기능이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2017)은 '마음의 안식처, 환경보호, 국민 쉼터로서 역할,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의 장, 안전한 먹거리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입니다.

❷ 공익 직불금 제도의 딜레마 : 농업인 기준과 농지 문제

첫째, 농사는 짓지 않고 농지만 소유하는 부재지주, 농사를 짓는 척 시늉만 내는 서류상의 가짜 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공익 직불금 제도 확대에 있어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또한, 공익 직불금 지급대상자인 '농업인'의 기준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점도 큰 딜레마입니다.

- 갈수록 농업보조금을 우습게 알고 진입하는 가짜 농업인이 양산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촌 현장 밀착형 관리 감독, 사회 전반적으로 '농사짓는 자가 농민이다'라는 인식의 대대적인 확산,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농지법 전면 개정, 농지와 농업 경영체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등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공익 직불제 시행의 중요한 취지는 식량자급률 향상인데 그것을 위해서 농지 면적을 유지하고 농지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각종 개발 행위 증가로 인하여 농지 규제의 범위는 점점 완화되고 있고 농지 면적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딜레마입니다.

- 공익 기능의 기본 기능인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과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기에 우려스럽습니다. 공익 직불금 제도와 농지 규제 완화 등의 제도가 상충하고 있어서 추후 공익 직불제의 성과지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2년과 동일하게 설정한 2027년 혹은 2029년의 목표치 55.5% 달성을 위해서라도 '농지 면적 유지'가 필수입니다.
- '농지는 공공재이다'라는 인식의 대대적인 확산, 개발 행위를 하기 전 '농지 영향 평가 제도',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농지 총량제', '농업 보호 구역 보존을 위하여 공익 직불금 지원의 대폭 상향 조정' 등과 같은 강력한 제도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2. 해결 방안

공익 직불금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농지와 농민 문제를 정상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농업과 농촌 공익 기능 증진 관점에서 기본형 직불 예산 중심 구조에서 선택형 직불 예산 중심 구조로 확장하는 전략을 강조해야 합니다. 공익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과 선택형 공익 직불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에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공익 직불사업에는 친환경 농업 직불 사업, 친환경 축산 직불사업, 경관 보전 직불사업, 전략 작물 직불사업 등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공익 직불제 예산 중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에 92%가 투입되고 있을 만큼 쏠림현상이 심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익 직불제 개선을 위해서는 선택형 공익 직불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❶ 선택형 공익 직불사업의 필요성

농업과 농촌만이 가지는 환경과 경관 보존, 전통문화 및 자연유산 유지, 마을공동체의 복원, 환경친화적 영농 방식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기여 기능 등을 위하여 읍면 혹은 마을 단위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토록 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이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 위기 대응, 마을공동체 복원, 농촌다움 문제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익 기능 수행이 왜 중요한지, 그 활동들을 통해서 농촌의 주민들과 국민들이 누리게 될 후생효과가 무엇인지 납득하게 하려면 선택형 공익 직불사업이 더 강조되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❷ 마을공동체 단위의 현장추진체계 필요

공익 직불금 제도 예산의 불용 및 미집행 사유는 '자격 검증 및 이행 점검 강화에 따른 부적합 면적 증가, 중복 신청 면적 제외, 지급요건 미충족, 편성 예산 대비 신청 면적 감소, 엄격한 기준에 따른 높은 생산비로 참여율 저조 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직불사업으로 쪼개지면 현장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이 낮아지고 신청률도 저하됩니다. 관리 감독 부서가 늘어나면서 통합적인 성과 관리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처럼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부정 수급(부재지주, 가짜 농업인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의 기술과 시스템 역량 고도화에 집중하되 시군, 그리고 읍면에 거주하는 농민과 주민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현장의 실천 사항을 존중하는 구조, 현장 추진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제대로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개별 단위가 아닌 집단 단위로 실천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마을공동체 단위 수준의 규약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 방식이어야 합니다.

❸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편

공익 직불제 5조 원 실현을 위해서는 (2024년 기준) 약 2.9조 원 예산에 추가할 2.1조 원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해 올 것인가를 농업계 스스로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보조사업, 특정 대상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조사업,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보조사업, 공익 직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중복되는 보조사업 등을 통합 혹은 축소 재편하여 그 예산분만큼 공익 직불금 제도 예산 확대에 쓰일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합니다.

❹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체성 강화

'농지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중요한 임무다', '식량자급률 향상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농업 경영체 자격을 획득하면 절대 눈감아 주지 않는다', '농민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라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요도 없는,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개발 행위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농지 전용 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농업 진흥 구역을 보호하는 등 규제 강화로 복원해야 합니다.

분명 농사짓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상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농업 경영체를 인정하는 기계적인 태도,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농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공감과 연민 의식의 부재, 시장경제 체제이므로 사유재산권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철학의 빈곤함 등은 농업과 농촌, 농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 활성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종서 운영위원장
농업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

1. 질문의 맥락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약 20% 내외로, 대부분의 먹거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친환경농업은 화학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토양과 수질 오염을 방지합니다. 또한,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을 높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은 일반 관행농업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20~5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소비자에게 잔류농약 걱정 없는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농업 방식입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친환경농업이 차지하는 농지 비율은 전체의 4.5%(68,165ha)에 불과하며,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정책 부족,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❶ 친환경 농산물의 경제성 부족

친환경농업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보다 평균 20~40% 낮은 생산량을 보이며, 생산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 비용을 충당할 만큼 높은 가격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농가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❷ 친환경농업 생산기술의 부족

두 번째 어려움은 친환경농업 생산기술의 부족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기술 개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촌진흥청 등 주요 연구기관들은 첨단농업 기술개발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고 있어, 친환경 농가들의 기술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❸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어려움

현재 약 40%의 친환경 농가가 계약재배를 통해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와 급식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❹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의 문제

현행 인증제도는 친환경 농가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여,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에 진입하거나 인증을 유지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친환경농업이 농정의 핵심과제가 아닌 일부 농민들만 실천하는 '틈새 농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계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 인식입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 탄소중립(Net-Zero 2050) 목표 달성을 위해 유기농업 확대를 중요한 전략으로 발표했습니다.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과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유기농업 비중을 8%에서 25%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직불금 확대, 소비 촉진, 생산 지원, 연구개발 투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국가 차원의 핵심 농정 과제로 인식하고, 범국가적인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래세대 및 취약계층 대상 친환경농식품 공급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 이후 직불제 개편, 인증제도 개선, 생산기술 연구개발 확대 등의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❶ 친환경농업 확대 목표 설정

2025년~2030년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 2030년까지 친환경농업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❷ 논 농업의 전면 친환경 전환

연도별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량 공공 수매하여 학교, 군대, 병원,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 급식에 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❸ 직불제 개편 및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하고, 생태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천 농가에 추가적인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❹ 미래세대 및 취약계층 대상 친환경 농식품 공급 확대

유치원, 초·중·고 학교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생, 군인, 임산부, 취약계층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추진 과제로서는 이 건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확대와 함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쌀을 비롯한 주요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 및 공공 수매 정책도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❺ 과정 중심 인증시스템 도입

현재의 농약 잔류 검사 중심 인증제도를 생태·환경 증진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 중심의 인증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❻ 전담 부서 및 정책 기구 신설

농식품부 내 '친환경생태농업국'을 설치하고, '친환경농산물 통합마케팅 보드'를 설립하여 친환경 생산·가공·유통 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축 순환 기반의 저투입·저비용 생산구조를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친환경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제조업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양승훈 교수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1. 질문의 맥락

현재 대한민국 제조업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한 혁신 역량의 편중과 지역 제조업 기반의 약화입니다.

❶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R&D 투자, 노동시장 격차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대기업의 평균 임금은 중소기업의 1.8배, R&D 투자 격차는 14배에 달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중소·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기술·자본·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협력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❷ 지역 제조업의 쇠퇴

수도권 중심의 창업 및 투자 생태계로 인해 지역 제조업의 혁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제조업 생태계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초광역 산업 클러스터 모델을 통해 지역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❸ 숙련 인력과 기술 인력 부족

지방 제조업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지방 제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숙련공들이 고령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기술 단절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단순히 저임금 노동력이 아닌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합니다.

❹ 디지털 전환과 첨단기술 적용 부족

글로벌 시장은 AI·스마트팩토리·친환경 제조로 빠르게 전환 중이지만, 국내 제조업의 변화 속도는 더딥니다. 특히 AI·빅데이터 기반 제조업 혁신이 지연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AI·로보틱스·스마트팩토리 등 미래 제조업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적용할 것인지, 기존 제조업과 첨단 산업 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2. 해결 방안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개편과 정책적 지원을 통한 전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❶ 초광역 제조 혁신 클러스터 구축

수도권 중심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지역 제조업을 디지털 전환과 함께 혁신해야 합니다. 부울경(부산·울산·창원) 광역 제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스마트팩토리·친환경 제조업이 집약된 신산업 중심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광역 전철망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기업 및 연구 기관 연계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❷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모델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구조를 확립하고, 기술 공유 및 공동 R&D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대기업의 투자와 협력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모델을 구축하고, 공공 벤처 펀드를 활용하여 중소 제조 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도록 합니다. 스타트업-중견기업-대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제조업 혁신 연구소(Manufacturing USA)를 통해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재원은 중소 미디어 기업·제작사의 경영 여건 개선, 제작·유통 구조 개선,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인력 양성 및 교육, 신기술 활용, 기타 조사·연구 등에 투입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소 미디어 기업·제작사들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적·정책적 틀을 확립해야 합니다.

❸ 숙련 인력 및 청년층 유입 정책

지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정착형 외국인 노동자 정책 및 청년층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자가 아닌 기술 인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교육·복지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제조업 종사자로 정착을 유도하고, 제조업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특성화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AI·스마트팩토리 등 미래 산업과 연계한 고급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❹ 기술혁신과 신산업 전환 가속화

AI·로보틱스·바이오·반도체 등 미래 제조업과 기존 산업을 연계한 혁신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조업 R&D 지원 방식을 개편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과제에 투자를 확대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글로벌 산업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남종석 연구위원
경남연구원

1. 질문의 맥락

지역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어 있고 숙련 인력과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❶ 지역 제조업 기반 붕괴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인 남부권(부산·울산·창원·포항 등)은 중화학공업과 기계·방위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전환(AI·스마트팩토리 등)과 첨단 기술 도입이 지연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가 심화되면서, 지역 제조업은 점점 더 낙후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R&D,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 제조업의 혁신이 더딘 상황입니다. '초광역 경제권(부산-울산-창원-대구-포항)을 중심으로 제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❷ 숙련 인력 감소와 노동력 부족

지역 제조업의 핵심이었던 숙련공들이 고령화(평균 연령 50대 이상)되었으며, 신규 인력 충원이 부족합니다. 청년층은 낮은 임금과 생활 환경 문제로 인해 제조업을 기피하고, R&D 인력과 엔지니어는 서울·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30~40대 생산 인력의 상당수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고 있지만, 이들은 장기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숙련공이 고령화되면서, 30~40대의 중간 기술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년층 유입이 어렵다면, 외국인 노동자 정착형 정책을 도입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❸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문제

미중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제조업의 자립성과 경쟁력 유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은 철강-기계-방산-IT를 아우르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이 산업 블록이 유지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독일·일본 등 주요 제조 강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제조업 인프라는 강하지만, 장기적 산업 전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존 중화학공업과 기계 산업을 기반으로 AI·자동화 기술을 접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2. 해결 방안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개편 인력 양성, 지역 제조업 활성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방 경제 활성화와 산업 균형 발전을 이루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❶ 초광역 제조업 클러스터 구축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부울경-대구-포항 초광역 제조업 허브를 우선 조성해야 합니다. 광역 전철망 등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물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지역 제조업과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팩토리·친환경 제조업 중심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❷ 숙련 인력 및 외국인 정착형 노동 정책 도입

기존 숙련공(50대 이상)의 기술을 유지하면서, 청년층 유입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존 숙련공의 지식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술 전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제조업 맞춤형 교육 및 고용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단순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숙련 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교육·문화적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장기 거주형 이민 정책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 특화 대학(예: 경남·부산 지역 대학)을 통한 제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❸ 제조업의 AI·스마트 팩토리 전환 지원

기존 중화학공업과 기계 산업을 AI·스마트팩토리와 접목하고, 기존 산업을 친환경·스마트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존 전통 제조업이 빠르게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R&D 투자 지원 및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대기업-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한 혁신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더불어 RE100(재생에너지 100%) 기반 제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산업 트렌드에 적응해야 합니다.

보호무역과 경제 안보 중심의 통상정책 흐름 속에서 우리 산업의 미래 전략은 준비되어 있는가?

허정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1. 질문의 맥락

산업과 통상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 시장 다변화 정책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보호무역과 경제 안보 중심의 통상정책이 강화되면서, 자유무역의 기조가 약화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EU는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자국 내로 유치하며 제조업 부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기존의 중국,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유럽,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❶ 산업정책과 시장 원칙의 균형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은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시장 왜곡과 민간 부문의 효율성, 창의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❷ 수출 시장 다변화와 기존 시장과의 관계

중국, 미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기존 시장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요 시장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5년 내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의 성과를 도출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는 5~10년 정도 내에 가능할 것 입니다.

❶ 초광역 제조업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의 산업 정책과 시장 자율성 간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규제 혁신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략산업 R&D 투자 확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 주도의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추진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K-칩스 법안과 같은 첨단산업 지원 법안을 마련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규제 혁신 및 세제 혜택: 신산업 성장과 맞지 않는 규제는 일몰제 또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시설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의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 첨단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수도권과 대규모 지방도시에 첨단산업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여 국내 생산 기지 역할을 강화합니다.

❷ 맞춤형 수출 다변화 전략 추진

중소, 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육성하고 유럽,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마련합니다. 또한 수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무역관 및 사절단의 역할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소, 중견기업 대상 수출 전략: KOTRA 역할 강화를 통해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를 컨설팅을 지원 하고 수출 바우처, 무역금융, 해외 네트워크 지원 확대를 강화합니다.
- 지역 특화 수출 전략- 유럽에는 친환경, 탄소중립 기술 수출을 확대하고, 동남아와는 K-디지털 플랫폼 및 제조업 협력을 강화합니다. 중동의 원전,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하고 중남미와는 농업, 에너지 인프라 협력을 확대합니다.
- 수출 금융 및 무역 네트워크 강화: KOTRA,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해외 네트워크 확충, 투자 지원에 힘쓰고 중소기업 대상 수출금융 지원 패키지를 도입합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 정세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산업별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글로벌 산업 강국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임춘택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에너지융합대학원

1. 질문의 맥락

에너지는 흔히 기후 위기의 주범이자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에너지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73%나 차지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으로의 에너지 전환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에너지 부문은 커다란 산업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에너지 분야 투자액은 2023년 3800조 원에 달했고, 이 분야는 매년 11%씩 빠르게 성장하는 중입니다. 또한 자동차·조선·철강·재료 등 전통산업 분야에서 전기화·수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탄소 청정 산업으로의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이슈가 극도로 정치화되어 있는 국내의 현실은 산업의 미래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국방이나 의료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치권이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는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❶ 지역 제조업 기반 붕괴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가동 원전 수명 연장의 원칙적 금지를 추진했습니다.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국민 대다수가 탈원전을 원했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으로 자연스런 선택이었습니다. 당시의 대선 후보들 대부분이 탈원전 성향의 정책을 표방했으므로 탈원전은 정쟁 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야심을 키우던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탈원전을 이슈화했고, 대선 과정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불법화·문제화 했습니다. 탈원전이 차기 대통령을 꿈꾸며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고위급 정부 관료의 정쟁 도구가 된 것입니다.
-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당락이 갈렸는데, 탈원전 이슈가 이 차이를 덮고도 남을 만큼 대선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탈원전이 일등 공신 이슈였고, 집권하자마자 친원전(탈탈원전이라고 주장)으로 보답했습니다.
- 그 결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됐고, 추가로 2기의 대형 원전과 1기의 소형 모듈 원전(SMR)을 짓는 계획을 반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자력계는 특정 정당을 극단적으로 지지하면서 정치화되었는데, 이는 다른 어떤 에너지 분야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정치 과몰입 현상입니다. 국내 원전은 과학과 경제성으로 포장되었지만 정치적 거래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탈정치화를 해야 할 때입니다.

❷ 정치적 희생양이 된 재생에너지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정치적 문제에 휘말려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풍력·수력발전 등의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그리드, 배터리, 에너지 효율 분야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에너지 전체 투자의 63%를 상회합니다. 청정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비는 2020년 9,340억 달러에서 2023년 1조 7,690억 달러로 증가했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려 연평균 23.7%의 높은 성장률입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느라 이 소중한 기회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 비리'를 수사한다며 가장 성장세가 빠른 태양광발전 분야를 위축시켰습니다. 겨우 9% 내외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정체 상태에 빠트린 것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RE100 기준을 국내에서는 맞추기가 어려워져서 공장

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태양광 모듈 분야를 비롯한 에너지산업 자체의 침체도 문제이지만, 탄소중립이 필요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탈정치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2. 해결 방안

에너지 분야의 탈정치화를 꾀하고 원자력 산업 혁신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❶ 에너지 분야의 탈정치화

이제 에너지 분야는 철저하게 탈정치화를 해야 합니다. 원전이든 재생에너지든 에너지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이 끝장날 것입니다.

-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모두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립을 위해 개발해 왔고 지금도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소중한 에너지원입니다. 정권과 관계없이 두 에너지 분야를 모두 육성하되, 시장 여건 변화와 안전 문제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❷ 원자력 산업 혁신

역대 정부는 원전과 관련하여 수출과 안전 문제에 대한 지원, 폐기물 처리, 해체 관련 연구개발을 변함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규모가 정권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원전 건설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탈원전과 친원전 정권 간 차이는 무시할 만합니다. 이를 정치적으로 증폭하여 이념화하고 갈라치기했을 뿐입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된다면 원전을 최대한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려의 결과가 이번에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2+1개 추가 건설안일 것입니다.
- 국내에 더 지을 수 있는 원전의 수는 그 정도가 최대치입니다. 추가 건설을 한다고 해도 이미 145GW나 되는 발전시설용량에 겨우 3.5GW 정도를 추가할 수 있을 뿐입니다.
- 국내 원전의 근본적 문제는 경직성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터빈이나 양수발전소와 같은 유연 전원을 필요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송전선이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면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타 발전원들이 송전 제약을 받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원전 증설을 검토할 때는 이런 문제를 같이 들여다보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를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가경제와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원자력계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원전 산업 비중을 20% 정도로 줄이고 방사선 산업에 대한 비중을 80% 정도로 늘리는 산업 혁신을 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원전 분야에만 인력, 연구개발, 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계적 시장 전망도 어둡고 경제성이 악화된 원전 분야에 과몰입된 위험한 상황입니다.
- 반면 방사선 산업은 세계적인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시장 규모가 원전보다 4배 이상 큽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진단과 치료, 농업 분야에서는 방사선 처리, 산업 분야에서는 비파괴 검사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원전 분야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훨씬 높습니다. 원자력계가 이러한 산업 내 전환을 꾀하고자 스스로 노력할 때 정부 지원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❸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우리나라가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탄소중립 달성을 비롯해 에너지 자급율 향상, 에너지 수입 감소, 에너지 수급 안정,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의 5가지 주요 국가 에너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린 수소 자급화도 이루어집니다. 사실상의 에너지 자립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적어도 70%는 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략 400GW의 태양광발전, 100GW의 풍력발전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되어 재생에너지가 주류 전원이 되면, 에너지 저장 수단인 배터리(ESS)와 양수발전의 수요가 크게 늘어납니다. 열원은 히트펌프로 대거 교체되어 아파트나 건물 단지, 산업단지 등에 대형 히트펌프 단지가 조성됩니다. 자동차의 주류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화석연료 사용량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산업이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그린 철강, 수소화학, 전기차, 전기배와 같은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됩니다.
- 이러한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2050년경에는 연간 에너지 분야 수출액이 300조 원을 상회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속성상 지역에는 연간 100조 원 이상의 에너지 소득이 생길 것이고, 지방정부에 매년 44조 원 정도의 재정이 제공될 것입니다. 에너지 산업 강국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 청정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자립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 혁신을 추진할 부처를 새로 만들고 정책을 조율해야 합니다. 목표 달성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대로 괜찮은가요?

윤세종 정책활동가
플랜 1.5

1. 질문의 맥락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최상위 지표는 정부가 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따라 각 부문별 감축 정책과 감축 수단이 만들어지고,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를 얼마나 막을 수 있는가' 혹은 '어느 정도의 기후변화 피해를 감내하게 될 것인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감축 노력으로는 3도에 가까운 지구 온도 상승, 즉 파국적인 수준의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후정책 수준을 평가하는 기후 대응 지수에서 전 세계 64개 주요국 가운데 61위에 꼽힐 만큼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나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❶ 2025년은 온실가스 장기 감축 목표 설정의 해

2025년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UN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2050년까지의 장기 감축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올해, 기후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입니다.

- 과학적으로 제시된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사실 과학적으로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감축 목표와 노력이 늘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축 노력에 들어가는 부담은 당장 발생하지만 기후변화의 피해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까닭에 지금까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단기적 이익을 우선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적 피해는 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의 몫으로 고스란히 전가되어 왔습니다.
-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낸 것은 결국 당사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2020년 3월, 19명의 청소년들은 국가의 기후 대응이 너무나 안일하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기후 피해가 미래세대인 청구인들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대한민국이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여야 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지속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❶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 개선

이제까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면서 당해 목표가 어느 수준의 온도 상승을 야기하는지,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몫에 비추어 충분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해야 하는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국민들이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 첫째, 파리협정이 제시하는 기후 대응의 마지노선인 '지구 온도 1.5도 상승 제한'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몫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제법에서는 이것을 '공정 배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에 대한 책임,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기술적 수준이 보유한 역량 등을 고려해 공정 배분을 도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여러 국가들이 감축 목표 설정에 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둘째, '탄소 예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축을 미루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지적입니다.
- 셋째,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달라진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의 피해는 현재와 미래에, 그리고 현재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습니다. 감축 목표가 단기적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기후 약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도록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넓히고 숙의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❷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각 부문별 희망 감축 목표를 취합하는 방식(bottom-up)이 아니라, 온도 제한 목표에 비추어 국가가 달성해야 하는 수준을 제시하고 부문별 실현 방안을 찾는 방식(top-down)을 적용한 다양한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권한 개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또한 개편해야 합니다. 현재의 위원회 구성에는 미래세대와 노동자와 농민 등 기후 약자가 배제되어 있어, 이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구조로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합의 달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들러리에 불과한 위원회의 권한 강화도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심의와 의결이 아닌 정책 이행에 대한 시정 명령과 예산 조정, 이행 점검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별 부처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❹ 국제적 기후 대응에 기여

기후 대응은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 중에는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활동이 포함되며, 그 시작점은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을 제대로 해내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의 10년이 그 뒤 수백 년, 수천 년의 기후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우리나라 기후 대응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전환 시대,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탄소중립 산업 전략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훈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1. 질문의 맥락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안보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제조업이므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반의 대전환 전략이 필요합니다.

❶ 전세계는 산업정책 르네상스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 이후 EU는 2023년 '그린딜 산업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을 제정하는 등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미국과 EU, 두 강대국의 전략은 탄소중립 산업 전환 과정에서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하고 청정기술 분야 제조 기반을 선점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약화되겠지만, 제조업 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제조업 3위 국가인 일본은 2023년 'GX 추진법'과 'GX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산업 전반의 녹색 전환 전략을 추진 중이며, 제조업 4위 국가인 독일도 '전환기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 안보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산업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조업 강국인 두 국가가 발표한 산업정책의 공통점은 산업 부문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1순위로 두고 기존 산업에서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와 구조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입니다.

❷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제고 전략 필요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8.7%(수출 38.0%, 수입 40.7%)로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세계 제조업 6위 국가입니다. 국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8.0%로 28.2%인 중국 다음으로 국가 경제의 제조업 의존도가 높습니다. 주요 수출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정제, 철강, 기계 순으로 에너지 다소비,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들을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부문 배출량의 98.6%가 제조업에서의 배출량이며, 이중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등 4대 난감축 업종의 배출량은 6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력산업에서의 탈탄소 전환 전략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며, 이는 경제 안보와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에 국내 탄소중립 산업 전략에는 기존 제조업의 탈탄소화 전략과 신산업 육성 등을 포괄한 산업 전반의 대전환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내 산업 구조에 기반할 때 청정 산업 육성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가 경제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국내 탄소중립 산업 전환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❸ 패러다임 전환 필요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국들이 자국 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만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킬 경우 국가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내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의 목적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같이 기후 측면의 목표에 한정하기보다, 국가의 경제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국가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난감축 산업을 비롯한 주력산업의 전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유형과 관계없는 적극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본과 독일 등 주요 제조업 국가들은 기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적 보조금을 확대하고, CCfD(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기업에의 지원을 지양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투자와 전략을 기반으로 탈탄소 전환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탈세계화에 따른 WTO 체제 붕괴 등으로 자국 우선주의 기반의 산업정책 강화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내 산업 보호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 등으로 정부의 기업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업들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 개선 의지와 경영활동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과 국민 경제활동의 근간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산업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적 근거에 기반한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 확보와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병행해야 합니다.

❶ 종합적 산업대전환 필요

제조업 기반의 경제·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와 구조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 대전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 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난감축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산업 전략을 수립하되, 산업 전환에 필수적인 에너지, 무역·통상, 인프라, 인력 양성, 수소·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유관 정책들을 포괄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 전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략의 지속성과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❷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와 혁신 기술 개발이 필요하므로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법적 기반과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별 상황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고 재원 배분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를 통한 세제 개혁과 보조금 정책으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였으며, 일본은 GX 추진법을 통해 경제이행채를 발행하여 공공자금을 조달하고 선투자를 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도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비롯한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비용을 추계하고, 국내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 투자 체계를 개선하여 산업정책과 예산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부문 전환 이행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❸ 산업정책 거버넌스 개선

정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질적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필요한 비용 추계를 한 바 없으며,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재원 규모가 작고 재원 조달 방안이 안정적이지 않아 타 기금에서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탄소중립 관련 재원 배분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산업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내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재원배분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국내 탄소중립 산업정책 거버넌스 체계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현재 체계로는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탄소중립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전환 전략 수립을 포함한 실질적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합적 관점에서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서비스에서는 병원 전 단계인 119구급대가 외면당하고 있지 않나요?

김성현 구급국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1. 질문의 맥락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응급의료란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인식은 응급실 도착 이후인 '응급처치 및 진료'에 집중되어 있고 법 개정도 주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최근 발생 빈도가 늘어난 대형 재난에 대한 대처, 응급의료의 시작점을 담당하고 있는 119 구급대의 상황 대응 활동에 장애 요소가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응급의료의 목적이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는데, 현 상황은 이에 맞지 않습니다.

응급의료 체계에서 119 구급대가 담당하는 병원 전 단계(pre-hospital stage)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응급처치를 의미하며, 이는 생존율과 예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하에서 언급한 장애 요소들은 의·정 갈등 이전에도 존재해 왔던 부분입니다.

❶ 현실과 현장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법 조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는 2017년 10월 24일에 개정된 것으로,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 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 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9 구급대가 환자와 접촉한 후에도 이송을 하지 못하고 병원의 수용 여부를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❷ 응급실 정보의 부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 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9에 통보된 수용 거부 사항이 없음에도, 전화로 정보 확인 시 환자 이송을 거부하는 응급의료기관이 많습니다.

❸ 응급실·의료진·구급대마다 다른 환자의 상태 평가

동일한 환자의 상태를 두고 2차 병원은 환자의 상태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해 수용을 거부하며 3차 병원 이송을 권유하고, 3차 병원은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2차 병원을 권유합니다. 이 과정에서 119 구급대의 이송 지연 문제가 발생합니다.

❹ 2차 응급실의 부재

응급환자들을 모두 3차 응급실로 이송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2차 응급실의 부족으로 적정한 처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3차 응급실로 환자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응급의료 체계에서 119구급대가 담당하는 병원 전 단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따라 현장과 현실에 맞는 실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의 현장 점검이 중요합니다. 환자 발생부터 최종 치료에 이르는 응급의료 전반의 실사 점검을 위해 부처를 넘나드는 협의체 조직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응급의료 체계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사 점검 시에는 힘 있는 집단이나 특정 이슈 단체의 의견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있는 있는 법 또는 현장 지침이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협의체는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지적하고 처벌하기보다는 문제점을 발견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이끌어 개선을 이루어 가는 방향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협의체 구성원들은 각각의 응급의료 분야에 종사하며, 일정 기간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실무자들이어야 합니다.

❶ 의·정 관계 회복이 가장 시급

의·정 갈등이 진행되는 동안 구급 현장에서는 특정인(1인 가구,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과 특정 과(내과, 신경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환자들이 응급실 이용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여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당직 병원을 지정하여 야간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정 관계가 회복되기 전이라도 국민들이 응급의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❷ 119 구급대의 권한 강화

국가의 재난, 응급상황을 담당하는 119 구급대가 긴급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❸ 소방 인력 편성 기준 수정

출동 건수 및 유동 인구를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재의 획일화된 소방 인력 편성 기준을 수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어촌 의료 취약지 병원은 왜 낙후되어 있나요?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최명석 원장
신안대우병원

1. 질문의 맥락

헌법 제11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3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 의료서비스 영역에 대입해 보면, 대한민국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경제적 사정이나 사는 지역 등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한 삶에 직결되는 보건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적시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필수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의료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나 수도권에 비해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❶ 의료 취약지 병원 낙후의 주요 이유는 병원 경영수지 악화

의료 취약지의 병원은 도시 병원에 비해서 유지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병원 운영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경영수지 악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진의 경험과 섬세한 문진, 그리고 청진기 사용 정도로도 1차 의료 현장에서 어느 정도 진단이 이루어졌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첨단 의료시설과 첨단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농어촌 인구 감소 및 낙후된 의료 취약지 병원 기피 현상으로 농어촌 병원 방문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의료진들의 의료 취약지 병원 근무 기피 현상으로 우수한 의료진 초빙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의료 취약지 병원들은 최신 의료시설이나 장비 도입이 힘들고 필수 의료진 부족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져서 다시 환자들이 기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의료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률들에 농어촌 의료 취약지 의료 기반 확충에 대한 조항이 있고 이에 따른 기금들이 조성되어 있지만, 분절적이고 구체성이 모호해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2023년 10월 19일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고 2024년 2월에는 지역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지방 대학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 중심으로 그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이 되는 의료 취약지 의료 기반 확충에 대한 정책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❷ 의료 취약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

우리나라 의료는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이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지만 다른 의료 선진국에 비해서 공공 의료가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일정 정도의 의료서비스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에 공적 지원을 한다면 공공 의료기관 신설·유지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의료 기반 확충·유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❸ 의료 취약지 의료 기반 확충·유지에 필요한 법률 신설, 일부 개정 필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 취약지의 지정·고시)에 따라 지정·고시된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3년 주기로 조사·발표)는 총 98개 지역이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은 89개 지역(행안부에서 5년 주기로 조사·발표)입니다. 양쪽에 모두 포함되는 지역 중 대학병원 분원 및 보건 의료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제외한 48개 지역(군 단위)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1차 필수 의료를 국가가 아닌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인구 소멸 지역과 의료 취약지는 대부분 일치합니다. 농어촌 지역 인구 소멸의 원인은 정주 여건·문화생활·의료·복지의 열악함과 질 좋은 일자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한 곳당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을 적어도 하나 이상을 당연 지정하여 유지비용을 지원하는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기금)이 확보되어 농어촌 의료 취약지 의료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❶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

현행법 제2조 4항에서 응급 의료기관 및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제12조에 의료 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여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제13조는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의 지정 및 비용 보조에 대한 법률 조항이지만 현재 소아청소년과·분만산부인과·인공신장실 지원 사업을 한 분야당 1년에 한두 곳 정도 진행하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도 유지비용에 턱없이 부족하여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참여할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이 이를 해결하고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일부개정안 제22조의6(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의 공익적 적자 계측)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이 공공보건의료 사업 등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공익적 적자를 계측하여 그 적자를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 및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원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❷ 필수의료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 의료·지역의료의 체계를 세우고 필수 의료를 지역 완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법안이지만, 제16조(필수 의료 취약지의 지정·고시)에 필수 의료 취약지를 지정하고 "필수 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필수 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률안에서도 그 지원책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❸ 의료 취약지 특별법 제정 필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필수의료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지만 여러 법률안에 분절적으로 흩어져 있기에 효율적인 집행이 부족할 수 있어 (가칭)의료 취약지 특별법을 신설하여 체계화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❹ (가칭)의료 취약지 의료 발전 기금 조성 필요

지금도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여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응급의료사업 영역은 매년 계속 확장되고 있어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 기관 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가고 있어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시행하는 공공보건 의료사업에 참여하면 할수록 의료기관 폐업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역 상생 발전 기금,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등과 연계된 법률 및 특별법에 농어촌 의료 취약지 의료기반 확충 및 지원에 대한 입법 취지도 담고 있으나 분절적으로 흩어져 있고 이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여 의료 취약지 지원으로는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입법 및 기금 조성 취지를 살려서 기금의 일정 부분을 전입하여 (가칭)의료 취약지 의료 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담배세, 주세 조정 및 건강세(설탕세, 비만세, 육류세, 정크푸드세 등) 신설 등을 통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AI, 왜 의료와 돌봄 분야에는 쉽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김미영 대표
한국1형당뇨병 환우회

1. 질문의 맥락

❶ 퇴원 이후의 질환 관리와 돌봄에 대한 관심 부족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오랫동안 병원 중심의 치료에 집중해 왔습니다. 반면 환자가 병원을 떠난 이후의 질환 관리와 돌봄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어려워지고, 환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돌봄은 공적인 지원보다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복 질환과 합병증 위험이 커지며, 그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가정생활도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돌봄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치료와 돌봄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병원 치료보다 퇴원 후의 일상 관리가 더 중요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이 부분이 환자의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남겨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복 질환 및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은 저하됩니다. 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효과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❷ 의료와 돌봄 분야에 더디게 도입되는 AI와 디지털 기술

AI와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지만, 유독 의료와 돌봄 분야에서는 도입이 더딥니다.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환자나 돌봄 대상자, 가족들의 의견과 사용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술에는 의료진과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환자와 가족이 직접 사용하는 기술에는 실제 사용자의 요구와 사용 경험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2. 해결 방안

환자가 직접 생성한 헬스 데이터와 병원의 의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디지털 기술과 AI를 통한 맞춤형 치료 및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❶ PGHD 표준화 및 활용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헬스 데이터를 생성, 이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가 직접 생성하는 헬스 데이터(PGHD,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에 대한 점진적 표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디지털·헬스 문해력 교육 강화와 병원의 의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치료 및 돌봄에 활용해야 합니다.

❷ 환자 및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환자 또는 돌봄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헬스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건강 이상을 의료기관 또는 개인이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❸ 규제완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돌봄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자의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❹ 맞춤형 서비스 개발

디지털 기술과 AI를 효과적으로 의료 및 돌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실질적인 요구, 경험,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완치되지 않는 1형 당뇨병,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김미영 대표
한국1형당뇨병 환우회

1. 질문의 맥락

❶ 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 관리 시 난점

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반응으로 인해 췌장의 베타 세포가 파괴되면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음식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통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만, 1형 당뇨병 환자는 외부에서 인슐린을 직접 주입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혈당 관리는 단순히 식사량이나 인슐린 투여량 조절만으로 불가합니다. 인슐린 효과, 식사 종류, 운동 강도와 같은 통제 가능한 요소뿐 아니라, 호르몬 변화나 컨디션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까지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동일한 환경하에 있더라도 혈당 변화가 불규칙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저혈당/고혈당 상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혈당의 불안정성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실제로 1형 당뇨병환자와 그 가족의 자살 위험이 암환자의 경우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질환 관리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1형 당뇨병환자들은 혈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슐린을 적절히 투여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CGM), 인슐린 펌프 등의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 케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기 및 서비스는 혈당 관리의 부담을 줄이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❷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은 1형 당뇨병환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이 90%에 달하며, 실구매가와 유사한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반면 성인 환자에 대한 지원 비율은 70%로 낮고, 기준 금액 또한 실구매가보다 낮아 본인 부담 비율이 30%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1형 당뇨병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완치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인이 되면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져 혈당 조절의 어려움과 합병증 발생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이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❶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이 사회 전체의 의료비 절감 및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현재 우리나라의 1형 당뇨병환자 중 19세 미만 환자는 8%, 성인 환자는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성인 환자에게도 소아·청소년 환자와 동일한 수준(기준 금액 및 지원 비율 90%)의 의료기기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성인 환자들에게도 필수적인 의료기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의료비 절감과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면 1형 당뇨병 관리의 어려움을 줄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돌봄 국가 책임제, 대한민국은 국민의 노후를 지켜 줄 것인가?

홍선미 교수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질문의 맥락

돌봄 국가 책임제는 사회적 생존을 위한 대한민국의 필수 과제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❶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

2024년 12월 23일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 4550명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566만 가구) 중 37.8%(214만 가구)가 1인 가구로 기존의 가족 중심 돌봄 시스템이 빠르게 붕괴하고 있습니다.

❷ 돌봄 공백과 비공식 돌봄 부담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노인 자살, 1인 가구 고독사, 영케어러 사건 등 돌봄 관련 사회적 이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공식 돌봄 노동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신체적·정서적·경제적·사회적 부담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간병 살인이나 동반자살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❸ 의료·요양·돌봄 비용 급증에 따른 돌봄 재정 부담 가속화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48조 9011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1%를 차지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 급여비는 14조 7675억 원으로 5년 전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후기 고령층(75세 이상)의 급여비 비중은 2022년 10.4%에서 2040년 19.6%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85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 돌봄 비용이 연간 약 580만 원에 달하면서 급속한 재정 악화가 예상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이며 지속 가능한 돌봄 제도 구축 과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❶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이 사회 전체의 의료비 절감 및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026년도 전국화를 앞두고 실시 중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은 중증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돌봄통합지원법에 명시한 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돌봄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로 인해 거주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료기관(1만 7832개소)의 88.5%(6만 1156개소)가 도시에 분포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장기요양 서비스 인정률은 서울 67.2%, 전북 52.6%로 최대 14.6%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취약계층 중심 선별적 복지로 인해, 중간 소득 계층 노인들은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0대 이상 일반 가구 중 34%가 노인 돌봄 부담을 호소하며,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제활동 포기로 GDP의 0.5%에서 0.9%에 해당하는 연간 11조 원(최저임금 기준)에서 19조 원(평균임금 기준)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❷ 시설 보호에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로 돌봄 패러다임 전환

노인들은 익숙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기를 원하며, 동시에 의료·건강·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65세 이상 응답자의 87.2%가 현재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돌봄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재가 서비스가 확대되면 중증화를 지연시키고 병원 비용을 23% 절감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계속 거주가 어려운 현실로 인해 노인들의 시설 입소와 입원이 지속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설 중심 돌봄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심의 인프라가 과잉 공급되는 상황입니다. 요양 병상은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 평균(0.6)의 9배에 이릅니다. 장기요양 보험의 시설 급여도 2024년 기준 전체 장기 요양 보험 급여 비용의 80~82%를 차지하고 있어 시설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덴마크의 경우 재가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 높습니다. 1988년부터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요양원 신규 건설을 금지하고 '주거·케어의 융합'을 위한 고령자 주택을 구축해 왔습니다.
- 스웨덴의 경우 1950년대부터 재가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여, 대부분 노인이 자신이 살던 익숙한 환경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합니다. 그 결과 병원은 주로 급성기 환자가 중심이 되며, 장기 요양과 재활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는 구조가 정착되었습니다.

❸ 다분야 통합 돌봄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실행력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은 기존의 개별 법률에 따른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근거 조항(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합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법에 따른 유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조문 외, 다분야를 포괄하며 각 제도 간 분절성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며 연계할 실질적 기제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2. 해결 방안

돌봄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돌봄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❶ 전 국민 돌봄 보장을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

국가 돌봄보장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가가 주도하는 돌봄 정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범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돌봄 정책을 국정 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세부 실천계획(action plan)에 따른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초고령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합니다.

사회적 돌봄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돌봄 정책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이며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❷ 돌봄 국가 책임에 따른 재정 투입과 비용 효율성 제고

돌봄 수요 대비 서비스의 충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사회서비스 예산 비중을 높이고, 장기 요양 단계 전후의 예방적 건강관리와 생애 말기 재가 돌봄 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야 합니다. 시설 급여 대비 낮은 재가 급여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해 형평성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의료 필요도에 따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장기 요양 보험 및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한국의 경우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요양시설은 장기 요양 보험으로 분리되어 있어 재정 관리가 분절적인 데 비해, 일본은 개호보험으로 의료·개호의 연계를 강화하고 통합 관리를 하면서 개호요양병상(요양병원)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독일은 장기요양금고를 설립하여 요양병원·시설의 재정을 통합 관리합니다.

❸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 강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돌봄 서비스 운영과 예산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재정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가 요양을 자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합니다. 한편, 과도한 시설 중심 요양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입원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돌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입원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돌봄 체계는 사회보험 방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서비스, 일반회계 기반의 재정사업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건강증진기금 기반의 치매 안심 지원 서비스 등이 각각 별도의 전달 체계를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중복 수혜와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으로 공급되는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종합적 실행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❹ 지역 중심 돌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통합 지원 절차의 이행

2026년 3월 통합돌봄의 전국적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의 효과적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돌봄 행정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제21조(전담 조직 등의 설치·운영)에 따라, 실행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의 돌봄 통합 지원 전담 조직 구성 및 읍면동 돌봄 담당 인력(돌봄매니저) 등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 행정 창구인 읍면동에서 핵심 통합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공공 인력의 배치 및 통합 지원 절차 수행 관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행규칙 등에 적시하여 일선 행정의 혼란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10조(신청발굴 및 조사 등),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제12조(종합판정 등),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통합 지원 절차에 관한 실행 지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대상자별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해 개인별 의료·돌봄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통합 판정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개인별 서비스 설계 및 맞춤형 돌봄 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할 실행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통합 지원 절차 중 제12조(종합판정 등)의 수행 주체를 직접 또는 위탁 등으로 제시한 데 따르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군구가 통합 지원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제공하는 공식적인 주체임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❺ 지역사회 계속 거주가 가능한 다분야 지역 돌봄 인프라 확충

노인들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택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도록 합니다. 방문형 서비스 외에도, 상시 개방 및 수시 대응이 가능한 소규모 주·야간 및 단기 보호 서비스, 통원형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확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 인프라 지역 우선으로 공공 요양·돌봄 인프라를 확대하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돌봄 취약지의 주민 공유시설에 소규모 통합형 거점 돌봄시설을 설치하고, ICT 기반 원격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경로당을 우선 보급하도록 합니다.
- 스웨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코뮨)가 전체 장기 요양 재정의 약 79%를 담당하며, 공립 너싱홈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본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공공 직영 또는 위탁 방식으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며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거점을 통해 서비스 분절성을 완화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❻ 시설 및 재가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 인력 관리 체계화

좋은 돌봄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인력 수급 및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인력의 자격·경력·보수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돌봄 인력개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정규직 비중, 불안정한 소득 구조 등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며, 돌봄 취약 지역의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장기 요양 요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 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시간제 계약직 비율은 53.6%입니다. 재가 서비스 기관의 계약직 비율은 74.7%로 특히 높습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임금은 기본 시급 1만 30원(2025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2,026원)과 연차수당(577원)을 합한 약 1만 2700원 수준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약 66.1%가 6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도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정신 건강 문제를 ‘배제’와 ‘수용’으로 다루면서 인권을 박탈할 것인가?

이한결 전략기획본부장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1. 질문의 맥락

❶ 반인권적인 수용 중심의 정신건강정책

수용 중심의 정신 건강 복지 정책으로는 결코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정신 건강 정책이 의료만을 강조한 결과, 정신 건강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개인화 및 병리화로 우리 사회를 오히려 병들게 하였으며 사회적 비용은 매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정신 및 행동장애에 사용되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예산이 약 7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연간 항우울제 복용량과 아동·청소년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량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정신 의료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신 건강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의료 기관의 강제 입원 비율은 약 35%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이 부재하여 퇴원 후 1개월 내 재입원하는 비율도 약 35% 이상이고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하여 퇴원 후 1개월 내 자살하는 비율이 66배 높았습니다.

수용 중심의 낡은 정신 건강 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청산하지 않는다면 온 국민을 위한 정신 건강 정책은 매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돌봄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사람 중심 권리 기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❷ 폐쇄적이고 반치료적인 정신병원

2020년 COVID-19 최초 사망자는 청도 대남병원에서 20년간 수용되었던 40kg 남짓의 남성이었습니다. 그 병원에서만 100여 명이 집단감염이 되었고 감염자는 생을 마감하거나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전원되었으며 COVID-19가 소강될 때쯤에는 또 다른 정신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번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평균 재원 기간은 200일이 넘습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이는 다른 국가의 평균이 30일임을 감안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국내 법률은 사인(私人)인 정신과 전문의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개인의 신체를 구금할 권한, 개인의 면회 및 통신을 제한할 권한, 개인의 사생활을 제한할 권한, 개인의 직업 활동을 제한할 권한 등. 그러나 막대한 권한을 모니터링할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모니터링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이지만 정신병원에 대한 연간 조사율은 1.2%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방문 또는 직권조사를 하더라도 폐쇄적인 정신병원의 특성으로 인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부터 존재하였으나 최근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부천 A 정신병원 사망 사건, 춘천 B 정신병원 사망 사건, 서울 C 정신병원 폭행 사건 등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치료는 결코 치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폐쇄적인 그리고 반치료적인 정신병원을 손보아야 합니다.

❸ 정신건강문제는 약물처방으로 해결불가

보건복지부 및 정신 의료계는 ‘조기 발견-조기 치료’를 강조하며 항정신병 약물이 모든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결코 항정신병 약물만 복용한다고 정신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정신장애인 중 1/3은 약물 복용 중에도 연간 평균 약 9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이용표 외, 2017) 즉,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 건강을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의 유무보다는 개인이 잠재력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삶의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안정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WHO, 2008) 그러나 현재 일상적인 진단과 약물 복용의 권유는 개인의 잠재력을 방해하고 환자를 양산하며 내재된 또

는 부여된 낙인을 강화해 결국 정신 건강에 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에서도 단순히 항정신병 약물만을 처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진단 및 치료보다 지역사회 서비스 선택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를 하며 항정신병 약물 중단을 포함해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화학적 약물을 통해 개인의 신체를 박탈하는 것은 고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행동 통제의 목적으로 수용시설에서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정신병 약물 처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인에게 주로 처방이 되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항정신병 약물 처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 당사자와 장애 아동에게도 수많은 항정신병 약물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보건복지부와 정신 의료계는 당뇨병과 같이 평생 약물을 복용하며 관리를 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반치료적인 정신 건강 정책을 개선하는 데 가장 큰 딜레마가 되는 것은 당사자인 정신질환자의 목소리가 너무 약하다는 것, 의료계의 카르텔이 막강하다는 것,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 포비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❶ 정신질환 당사자의 참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는 정신 건강 정책을 개발하고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정신적 상태를 경험하는 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 등 정신적 상태를 경험하는 당사자의 목소리는 너무 약할 뿐더러 잘 들어 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관련 정책을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와만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정신건강의 어려움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는 그 경험을 생생하게 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정신 건강 정책을 바꾸겠다고 추진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에서 당사자 위원은 1명뿐이었으며 과반 이상이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맞았을 때, 사람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 모든 억울함이 '증상'으로 치부될 때 당사자 단체는 미약하나마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목소리가 약합니다. 정신의료 예산은 약 7조 원, 지역사회 정신 건강 복지 예산은 약 4000억 원, 당사자 단체 예산은 겨우 약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❷ 동료지원 전달체계 필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모범사례로 소개할 정도로 우수한 사람중심 권리 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중 하나인 동료 지원 쉼터를 당사자 단체에서 입법하는 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2월 본회의를 어렵사리 통과하였지만 입법 운동 당시 의료계는 '환자가 환자를 상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동료 지원 쉼터가 생기면 입원해야 될 사람들이 입원하지 않을 것이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어렵사리 통과되어 매우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료 지원 쉼터는 매번 대기 인원이 30명이 넘을 정도로 지역사회 내 이용 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서비스 만족도 역시 매우 높으며 강제적인 개입을 예방하고 전통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을 낮추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우려와 다르게 동료 지원 쉼터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전달 체계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계의 카르텔로 인한 집단적 방해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강제 입원 조항 중 보호 입원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4헌가9) 그 이후 정신 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이라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료계는 정신질환자 대부분 퇴원하여 사회적 혼란이 초래해 사회가 붕괴한다는 등 위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이 바뀌었으나 강제 입원률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나오지도 못하였습니다. 변한 것은 의료 수가만 인상되었을 뿐입니다.

❸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전환

언론 및 의료계를 통해서 생산되고 또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은 무서운 질병으로만 묘사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상태는 우리 사회로부터 퇴출하여야 할 위험 요소이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죄를 짓지 않더라도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전 모 학교의 안타까운 사건, 진주 아파트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은 정신질환을 부각하고 위험성하고 관련시켜 마치 '제어할 수 없는', '위험한' 등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해 나갑니다. 하지만 현재 글을 쓰고 있는 저를 (조현정동장애)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아도 일반인구에 비해 범죄율은 낮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❶ 당사자의 목소리 강화

정신 건강 복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제협약과 국제기구는 이와 같은 당사자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당사자가 참여하여 만드는 제도가 실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낡은 정신 건강 정책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흐름에서 정책 변화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 첫째, 인권 기반의 치료 환경 구축입니다. 인권 기반의 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상 응급 및 위기에 대한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가족 간 갈등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던 보호 의무자 제도를 폐지하여 동의 입원과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없애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권침해가 발생한 정신병원을 폐쇄하고 정신병원 내 강박을 금지하며 치외법권과 성역이 되어 버린 정신병원을 개방해 독립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 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을 당사자 주도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치료를 하는 이유도 결국 그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지역사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탈원화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주도의 동료지원 전달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동시에 당사자에게 부여된 불합리한 자격 및 결격 조항을 폐지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충해야 합니다.

타 장애 영역은 장애 당사자나 장애 당사자의 가족들로 하여금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모 연대 등 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며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실현시키며 성장해 왔습니다. 반면에 정신질환 등을 경험하는 심리 사회적 장애 영역에는 어떠한 토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 문제로 쉽게 전환되어 집단 조현병이라든가(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임대주택서 정신질환자가 나온다는 등의(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 정치적 비하의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핵심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당사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것처럼 정신장애 영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동료지원센터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동료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동료 지원 전달 체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그 결과 동료 지원 전달 체계가 단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❷ 동료지원 전달체계 강화

동료 지원인, 동료 지원 쉼터, 동료 지원 센터, 동료 지원 카페 등 동료 지원을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 정책은 매우 효과적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동료 지원은 비임상적 상황에서 공감

과 경청을 바탕으로 독특한 현실 세계와 정신적 상태를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그 결과 실제 전통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낮추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정신의료 개입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를 완화하고 예방하며 치유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메디케이드(medicaid) 재원을 동료 지원인에게 지급하며 동료 지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치료를 받는 이유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당사자는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과 정신적 상태 속에서 가장 평범한 삶을 꿈꾸는 것 역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매우 중요하며 그 핵심이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핵심은 동료 지원 전달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 정신적 상태를 경험한 당사자는 경험 전문가이며 해당 경험에서 어떻게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움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동료 지원 쉼터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병원이 아니라, 일상이 오히려 무너지는 병원이 아니라 그 이전에 동료들로부터 위안을 얻고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현재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료 지원 주택, 동료 지원 센터, 코워커 센터, 권리 보장 센터, 24시간 안심 센터, 동료 지원 쉼터, 동료 지원 카페, 동료 지원가가 상주하는 초단기 보호실, 동료 지원 팀이 있는 1차 의료기관 등 동료 지원을 중심으로 구축된 동료지원 전달 체계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비강압적 원칙 아래,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실천을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실제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이 인권에 부합하며 미래의 정신건강 정책에 매우 중요한 지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조기 집중 치료를 강조하며 조기에 발견하여 입원 및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많은 당사자들은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기 이전에 자신에게 크나큰 사건이 닥쳐왔을 때,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며 나와 그리고 외부 세계와 단절이 시작되었을 때 조기의 집중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료지원, 정서적 심폐소생술(E-CPR) 등 대안적 접근과 주거, 직업 등 사회적 지원은 정신 건강을 회복시키고 다시 타인과 타인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❸ 정신병원환경개선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정신의료 영역에 대한 또 하나의 개혁은 권리 보장 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신병원은 무소불위, 치외법권, 성역입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외부에 알려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조차 쉽사리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정신병원의 폐쇄적 구조는 어느 순간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썩어 버린 상태입니다. 이제라도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신병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환경 개선을 위해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 4일제는 과연 불가능한가요?

김종진 소장
일하는시민연구소

1. 질문의 맥락

주 4일제 도입은 왜 필요한가?

❶ 한국은 과로사회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연간 근로시간이 1,874시간 (평균 1,782시간) 가장 긴 국가(하위 5위)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2004년 7월부터 소위 '주5일제'(1주 40시간, 1일 8시간)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과로 공화국'의 오명을 겨우 벗은 정도입니다.

-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는 물론 유럽연합(EU)에서는 1주일 최대 연장 근로시간을 48시간(한국 52시간)으로 규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과로사회를 벗어나 좋은 직장과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으로, '주4일제' 가 유럽과 영미국가들은 물론 한국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❷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

이미 유럽 및 일부 국가들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과정으로 가는 길에 이산화 탄소 배출과 직원들의 출퇴근 교통량 감소 등을 통해 '주4일제'를 미래 지향적 과제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 자동화(스마트 팩토리), 민간과 공공 전반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플랫폼과 AI(인공지능)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과 일자리 감소과정에서 주4일제 도입 과정에서 일자리 나누기/창출((Work Sharing)도 이제는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 일과 삶의 균형은 단순 '워라벨'(WLB)이 아니라, 돌봄과 학습, 자기계발과 지역 및 정치사회 그리고 각종 공동체 활동을 위한 자기모색의 시간을 가져야 함 지속가능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아실현이라는 본원적 답을 찾을 기회를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주4일제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건은 저하되나요?

❶ 근로조건의 저하없는 주4일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개정으로 통한 노동시간 단축(주4일제)는 기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은 연차휴가부터 복지제도 등 감축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 개별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직원 복지나 유능한 인력 채용을 위해 주4일제나 격주 주4일 혹은 4.5일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직자 1년 이상부터 15일 부여되는 법정연차휴가(근속 2년마다 1년 추가, 최대 25일)를 없애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불이익 조치입니다.
- 일부 회사에서 1일 10시간의 주4일 출근하는 형태는 1주일 법정노동시간인 주40시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기에 가능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직원 과반의 동의 없이 주4일제 시행을 명목으로 임금을 자의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불이익 조치입니다.

❷ 구체적인 적용은 기업별로 차이

그럼에도 주4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일부 사업장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회사)의 상시 종사자가 5인 미만(4인 이하)일 경우에는 현재에도 연차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1주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월 60시간 미만)이나 단시간 파트타임 및 일용직 종사자는 당연히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이라 주5일제 시행과 동일하게 주4일제(풀타임) 적용되지 않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합니다.

2. 해결 방안

주4일제 도입 핵심방안

❶ 점진적, 단계적 전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1주일 연장근로 한도 기준인 '52시간'(1주 40시간 + 12시간 초과근무)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인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실근로시간(1주 40시간)을 단축하면서 주4일제를 병행하여 도입해야 합니다.

- 주4일제는 현행 법정 노동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단축하는데 있어, 1일 7시간의 32시간인 주4일제를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40시간을 32시간으로 가는 데는 쉽지 않기에 과도기적으로 4.5일제(1주 35시간/36시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시행 과정은 과거 주5일제 시행처럼 현행 「근로기준법」(50조, 53조 등)을 노·사·정 3자가 사회적 대화 과정을 통해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친 이후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을 진행합니다. 25년전에 주5일제가 논의될 때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❷ 기업별로 다양한 주4일제 도입

주4일제 모델은 최소 두 가지 운영 모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병원처럼 1년 365일, 1주일 7일, 24시간 운영하는 회사와 1주일 5일만 운영하는 회사는 시행 모델이 다릅니다.

- 병원, 항공, 철도 등의 회사는 현재처럼 7일 회사/사업장이 운영하되, 해당회사 직원이 주7일 중 4일 출근(교대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호텔이나 관광·레저 등 민간서비스 영역에서도 주6일이나 7일 운영하는 곳은 이와 비슷합니다.
- 주5일 기업/회사가 운영하는 곳은 2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매주 금요일(혹은 월요일) 영업을 하지 않고 4일만 운영하는 형태는 일부에 불과하고 5일 회사는 그대로 운영하되 직원들이 6개월이나 1년 동안 5일 중 1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도 있습니다.

❸ 주5일제 도입도 치열한 사회적 논쟁의 결과

물론 주4일제 도입하는데 가장 큰 딜레마나 반대/논쟁 사안도 있게 차분하게 토론하면서 제도와 정책 이해도를 높이면서 추진해야 합니다. 주5일제도 1998년 처음 이야기가 나오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 국회와 노사정 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 첫째로,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 이전까지 주6일(월요일-토요일 근무) 근무하다가, 주5일제를 시행한 곳들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2017년 연구에서는 "주5일제 시행 이후 10인 이상 제조업의 1인당 연간 실질 부가가치가 1.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 밖에도 관광 및 여가 그리고 조직과 개인의 다양한 변화 등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에 끼친 긍정적인 효과들이 우려했던 점들을 상쇄했습니다. 당시 주5일제 찬반 토론이 치열할 때도 지금과 같은 다양한 반대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❹ 주4일제 실험은 현재진행형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주4일제 논의가 시작되었고,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도 몇몇 정당에서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 실제로 최근 주4일제는 국가(아이슬란드 취업자 1% 실험, 스페인 정부 중소기업 실험)부터 지자체(프랑스 리옹, 스페인 발렌시아 등)은 물론 개별기업(영국 아톰은행, 프랑스 유통업 리들, 독일 적십자병원 등)의 실험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도 세브란스병원, 대명소노빌, SBI 저축은행, 휴넷(중견기업), 코아드(중소기업) 등 전면 혹은 부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우리는 1998년부터 프랑스가 '1주일 35시간제'(1일 7시간, 5일 출근 혹은 1일 8.5시간, 4일 출근 등)를 시행하면서 검토한 제도운영과 시행 및 지원내용(2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 최저임금 전후 임금 노동자 지원)을 참조 하면서 도입을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워라벨 지원사업, 함께 일하기 지원사업 등의 형태로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참고: 주4일제 관련 해외 및 국내 자료, 사례, 법률 등은 아래의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주4일제 네트워크 4 day Week Network, Korea: www.4daynet.co.kr

프리랜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권오성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질문의 맥락

소위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4대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❶ 긱이코노미의 확산과 프리랜서의 보호문제

일하는 사람은 전통적으로 노동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노동법 적용 대상 밖의 '자영업자'로 구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균열일터'라는 말이 상징하듯 현대의 일터는 지난 세기의 균질성을 상실하였고, 표준적 고용 관계에서 벗어난 다양한 일하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던 전통적 종신고용 형태가 점차 사라지고, 불안정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외주화 등을 통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내지 '프리랜서'로 불리는 비공식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취약성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즉시의 수요에 따라 인력을 활용하는 긱 경제(gig economy)가 확산되면서 프리랜서의 보호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❷ 일하는 비근로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

근로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는 노동법의 오랜 숙제였는데, 최근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각종 프리랜서의 무권리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을 통하여 단발적으로 일을 수급하는 플랫폼 종사자나 긱 워커라고 불리는 신종의 일하는 사람의 급증(음식 배달 대행업 등)도 시급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 여러 국가에서 '비근로자'인 일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전통적인 근로자의 범주에서 배제된 일하는 사람의 법적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고려되는 방법에는 크게 노동법의 적용 대상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과 근로자와 비근로자 사이에 '제3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러한 '제3의 범주'에 적합한 보호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근로자보다 넓은 범위의 취업자(일하는 사람)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노동법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프리랜서가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가의 검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는 종래 판례의 기준에 의해서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자영업자로 위장하여 다루는 실태(협의의 "오분류")의 해소와 다양한 프리랜서의 출현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태를 고려한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라는 두개의 과제가 포함됩니다. 물론, 노동자와 비노동자의 선 긋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큰 과제입니다. 이는 현실적 타당성과 이론적 명확성·정합성의 양립이 쉽지 않다고 하는 이 문제 특유의 어려움 때문이지만, ILO, EU, 여러 외국에서는 프리랜서의 일부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념을 어느 정도 넓게 이해하더라도, 어떠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말하기 어려운 프리랜서가 남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근로자 유사자" 등의 제3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노동자와 그 이외의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보고, 그들에게 공통하는 노동법상 및 사회 보장상의 보장을 정하는 방법, 각각의 프리랜서의 특성에 맞춰 개별적으로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최저 보수의 보장, 산재보험·고용보험의 적용, 부당한 계약 해제의 규제 등), 공정거래법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금지 규정 등 경제법의 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을 채용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자성의 재검토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합니다.

2. 해결 방안

❶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

종래 노동법이 다양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하고 일부를 배제해 왔다면, 앞으로의 노동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고 포괄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근로자 개념에 해당하는가를 묻지 않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을 마련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격을 보호받을 권리(괴롭힘의 금지),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쉴 권리, 모성보호, 계약의 존속보장(부당해지 제한)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하는 불가결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범주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자는 발상입니다.

❷ 근로기준법의 보완으로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이러한 기본법의 입법은 기존 노동법(예컨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해체하거나 완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다투어지는 일하는 사람은 쟁송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전이라도 기본법상 보호는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급하여 근로기준법상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을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의 관계에서는 보충적인 보호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없나요?

유성규 겸임교수
성공회대학교, 공인노무사

1. 질문의 맥락

우리나라는 산재 왕국으로 불릴 정도로 산재 문제가 매우 심각한 국가입니다.

❶ 심각한 산업재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재 문제의 심각성은 국제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은 0.43‰로 OECD 38개국 중 34위였습니다. 0.43‰는 1970년대의 영국, 1990년대의 독일과 일본의 수준입니다.

❷ 높은 재래형 산재

2023년 산재사고 사망자 812명 중 35.2%인 286명이 떨어짐 사고로 사망했고, 10.8%인 88명이 끼임 사고로 사망했으며, 8.5%인 69명이 부딪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❸ 위험의 외주화, 이주화, 고령화

2023년 산재사고 사망자 812명 중 78.4%인 637명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10.5%인 85명이 이주노동자였으며, 64.2%인 521명이 55세 이상의 노동자였습니다.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무 제공자(특수고용 노동자)의 수가 2019년 14명에서 2023년 83명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재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책, 예방 감독 행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1981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❶ 산업변화에 뒤처진 산재예방 법제도

기간제 노동자, 파견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음에도, 현행 법제도 및 정책은 직접고용, 종신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정규직 노동자 보호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크게 늘었음에도, 현행 법제도 및 정책은 전통적 근로 계약관계 하에서 일하는 노동법상 노동자 보호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 및 정책은 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한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집중시킴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업주의 안전 보건 관리 능력은 낮은 사업장에 이주노동자 및 고령 노동자의 취업이 집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 및 고령 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이 다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적인 법제도 및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❷ 산재예방을 위한 행정력 취약

2022년 현재 고용노동부 산업 안전 감독관의 정원은 806명에 불과하여, 기본적인 산재 예방 업무는 물론 산재 사건에 대한 수사 업무조차 수행하기 벅찬 상황입니다.

2022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297만 6026개,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가 2017만 3615명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산업 안전 감독관 정원 806명이 모두 확보되어 모두 예방 감독에 투입되더라도 1인당 3692개 사업장, 2만 5029명의 노동자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방 감독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각 지방청의 산재 예방 부서의 인력이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산재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경험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부족한 예방 감독 행정력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이주노동자, 고령 노동자,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이른바 산재 취약 노동자에 대한 예방 감독 행정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었습니다.

❸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

2023년 산재사고 사망자 812명 중 34.2%인 278명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소규모 영세 하청기업에 중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위험을 전가한 원청 기업이 처벌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은 물론 법 위반 행위와 중대 재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산재 사건의 특성상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중대 재해를 야기한 사업주 등이 이를 악용해 처벌을 피해 갈 위험성이 큰 상황입니다.

2. 해결 방안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 예방 감독 행정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❶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비정규직 노동자,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필요합니다.

- 기간제 노동자, 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잦은 이직, 단기 고용 등으로 인한 산재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원청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제어하고 원청 기업이 이익에 비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동법상 노동자성 유무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자 생명안전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유해 위험 요인으로부터 자유롭게 피할 수 있는 '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❷ 취약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가 사용자의 역할을 자임해야 합니다.

-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은 산재 예방을 위한 법적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서 안전 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부가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역할을 자임하여 안전 보건 관리를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와 고령 노동자의 인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산재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 이주노동자와 고령 노동자는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주노동자와 고령 노동자의 인적 특성과 결합해 높은 산재 발생률로 이어지게 됩니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 업종 및 사업장 적응 프로그램, 고령 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이주노동자 및 고령 노동자의 인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산재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을 위한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재래형 산재는 기초적인 안전 보호구, 안전설비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빠른 시간 내에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동 안전 관리자 제도의 적용 대상, 지원 수준 등을 대폭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 원청 기업이 처벌되기 위해서는 하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내하청이 아닌 하청기업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무리한 납기일 설정, 불공정한 단가 설정 등 원청 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도 원청이 처벌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고의성 추정, 법 위반 행위와 중대 재해 간의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산재의 특성상 고의성이나 법 위반 행위와 중대 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의 추정, 인과관계의 추정의 도입을 통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사업주 등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추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❹ 산재예방을 위한 예방 감독 행정력 확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 산재 예방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의 집행을 책임지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재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청의 산업 안전 감독관 인력의 규모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증원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와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 권한 공유를 통해 법제도 및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되고 산업 안전 감독관이 증원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 새로운 고용 형태 등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근로 감독 권한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를 산재 예방에 활용한다면, 법제도 및 정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지방정부의 근로 감독 권한의 공유 범위는 실태 점검, 인허가 등 고용노동부의 행정력 분담을 위한 업무, 소규모 사업장, 새로운 고용 형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에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연구를 위한 전문 기관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 산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법제도 및 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산재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산재 통계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 산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법제도 및 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산업구조,

고용 형태 등으로 인한 새로운 유해 위험 요인, 새로운 직업병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는 여러 기관에서 파편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연구를 위한 충분한 예산 및 인력도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 미국의 NIOSH, 핀란드의 FIOH 등과 유사한 전문 기관을 설립하여 산재 통계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정확한 산재 실태 파악, 산재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남녀에서의 약의 부작용은 다른 것일까요?

김나영 소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차의학연구소,
대한성차의과학회 회장

1. 질문의 맥락

왜 남녀에서의 약의 부작용은 다른 것일까요? 이러한 남녀 차이는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졸피뎀과 같은 약은 지방에 잘 흡수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체내 지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약은 여성의 몸에 더 오래 남아 있게 됩니다. 또한, 남녀의 심장 박동에도 차이가 있어서 시사프라이드와 같은 약은 여성에게 더욱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호르몬의 변화 역시 간을 통해 대사되는 약물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신장의 크기 또한 여성이 더 작으므로 신장을 통한 약물의 배출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체중 및 표면적도 여성이 남성보다 작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약물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약을 개발할 때나 기존 출시된 약의 사용에 있어서 성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❶ 수면제 졸피뎀

최근 문제가 된 약은 수면제 졸피뎀입니다. 2011년 Lindsey Schweigert는 잠옷을 입은 채 경찰차 뒷좌석에서 깨어났는데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 보아도 왜 자신이 거기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수면제 졸피뎀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몽유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우 황당해했지요. 이처럼 미국에서만 약 700여 건의 졸피뎀과 연관된 교통사고가 보고되었고, 연구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졸피뎀이 체내에서 대사되고 배출되는 속도가 느려서, 남성에 비해 높은 혈중 약물 농도가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FDA에서는 2013년 졸피뎀을 복용하는 사람에 대해 복용 다음 날 운전 또는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을 피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첫 처방 용량을 기존의 절반인 5mg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처음 약물을 개발하고 치료 용량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❷ 구토 억제제 탈리도마이드

가장 주목을 끈 약으로는 기적의 입덧 치료제로 불리던 탈리도마이드를 들 수 있습니다. 탈리도마이드는 1953년에 진정제로 처음 개발되어, 그뤼넨탈(Grünenthal) 제약회사의 콘테르간(Contergan)이라는 제품명으로 1957년 판매가 시작된 약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지만, 쥐와 토끼 등 각종 동물실험에서 부작용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기적의 약으로 선전되었고, 세계 약 50여 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진정제, 수면제로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입덧을 진정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많은 임산부들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부터 1961년 사이에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출산하면서 그 위험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1962년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기 전까지 1만 명 이상의 기형아가 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임신 42일 이전에 이 약을 복용하면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사지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짧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소실된 기형아를 출산하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인간, 특히 여성과 임산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탈리도마이드 사건과 같은 여성에게 치명적인 약물 부작용을 경험한 후, 여성의 임신 가능성과 이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대한 우려로 오히려 임상시험에서 여성이 배제되었습니다. 여성의 생리 주기와 호르몬의 변화 또한 임상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연구자들은 가능한 한 약 이외의 다른 변수들을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임상시험에서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현재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이후 미국 FDA에서 여성을 임상연구에 포함시키도록 연구 가이드라인을 바꾸면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별 변화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❸ 소화기 운동 촉진제 Prepulsid

미국 회계 감사원에서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부작용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된 10개의 의약품을 조사한 결과, 8개의 의약품이 여성에서 남성보다 더 높은 위험도를 나타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식욕억제제처럼 여성이 더 많이 복용하는 약이기 때문인 경우도 있었으나 Prepulsid (상품명 '시사프라이드')처럼 여성에게 더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원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사프라이드는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해서 위장 운동을 촉진해 주는 약으로 1980년 처음 개발되어 역류성 식도염 등 위장 질환의 치료제로 아주 인기가 좋았던 약입니다. 필자 또한 소화기내과 의사로서 많이 처방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폭식증으로 인한 위 불편감으로 이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던 캐나다의 15세 여성 Vanessa Young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채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사프라이드가 특히 여성에게 치명적인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제약회사는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그 약을 많이 처방하고 있던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❹ 성차 의학은 편향성을 지양하는 의학연구

'소아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라는 문장에 거의 모든 의사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작은 남자가 아니다'라고 인식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의학이 남자 중심이고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남성 중심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여성 건강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내분비 및 여성 성기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당뇨병이나 심혈관질환에서 남녀가 다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주로 생물학적인 성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물학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관계에서의 역할이 여러 질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이 알려지게 되면서 젠더 의학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고, 2000년에 들면서 생물학적인 측면과 같이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성차 의학'이라는 단어가 정립되었습니다. '편향성을 지양하는 의학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남녀 모두의 건강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취지를 생각하면 '성차 의학'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성차 의학뿐 아니라 기초의학에서의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학에 중요한 약학, 자연과학, 수의학, 간호학 및 AI 등의 과학이 합쳐진 개념, 즉 성차 의과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여성에게 중요한 이 과제 해결을 하는 주체가 대부분 남성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신체적 문화적 경험이 여성과 다른 남성은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하여 대세가 된 정밀 의학에서 성차와 연령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너무도 당연한 성차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남녀 모두에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의 복잡도가 올라가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미국 연구기관인 NIH에서 연구비 지원서에 성 혹은 젠더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면서 연구 설계부터 분석 및 보고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성을 하나의 생물학적 요인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동물실험에서 수컷, 암컷을 모두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라는 규정이 발표되었을 때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2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로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당장 동물실험실을 2배로 늘려야 하는데 현재도 포화가 되어 동물실험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연구재단이나 보건복지부, 그리고 산자부, 국립보건원 등 연구비를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규정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연구자의 70%를 차지하는 남성의 반발 및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에서 연구 투자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남성이라는 점이 딜레마입니다. 여성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데 말입니다. 2005년도 「Nature」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여성과 남성의 유전적 차이는 약 1%입니다. 99%는 같다는 뜻입니다. '고작' 1% 차이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 직후 발행된 「Nature」 논문에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적 차이가 1.2%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성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질병이라도 남녀 간에 차이가 있기에 각각 원인 파악과 치료에 있어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차 의학에서 남녀의 차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호르몬이나 유전자에 의해 차이가 나는 성(sex)적 측면입니다.

둘째는 남녀로 태어나 사회, 문화적 역할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젠더(gender)적 측면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이 남녀 간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나 실제 질병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의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성차 의학입니다. 예를 들어 장 질환에 대해 남녀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잘 활용하면 남녀 간에 더 디테일한 진단과 치료 방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는 각 질환의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 치료에 대한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각각의 서로 다른 성호르몬이나 유전적 성향이 질병에 영향을 주거나 또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여건이 질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나 과민성장증후군과 같은 기능성 위장관 질환들은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젠더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합니다.

2. 해결 방안

정밀 의학에서 중요한 성차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국가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❶ 법률적 규정 정비

2021년 3월 24일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매우 큰 희망을 주었지만 강제력이 없어 유야무야되고 있습니다. 일정 유예기간이 끝나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는 등 규정을 정비해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❷ 성차 의학 연구소 전국적 설치 유도

학술 연구를 담당하는 성차 의학 연구소를 전국 의대나 병원에 많이 설치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생적 개소를 기다리는 것보다 의대나 병원에 성차 의학 연구소를 개설하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이나 병원 의료기관 평가 인증 과정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유도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및 독일,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성차 의학이 매우 큰 관심을 받는 분야로 각 기관의 성차 의학 연구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WHSDM (Women's Health and Sex Differences in Medicine) Center, Mayo Clinic의 Women's Health Research Center가 여성의 건강과 함께 질병의 성별 차이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유럽도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 베를린에 있는 Charité-Universitätsmedizin Berlin은 매우 활발히 성차 의학 연구를 하고 있으며 교육에도 열심입니다. 성차 의학을 필수과목으로 정해서 의대생에게 일찍 그 중요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❸ 성인지적 R&D 기획과 예산 지원

의료산업에서도 성인지적 R&D 기획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R&D 사업은 전반적으로 첨단과 산업화에 너무 치우쳐 임상 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차 의학 연구는 우선순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R&D 기획과 예산 확보에 있어 국내 임상 현장 중심의 성차 기반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침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기형아 출산과 교통사고와 같은 사례로 소개 드린 바와 같이 성차 의학이 중요한 이유는 1%의 다름이 환자 개인의 불행으로 단기간에 겪고 말 사고가 아니라 환자를 둘러싼 가족과 이웃이 오랜 기간 고통과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적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왜 성평등(페미니즘)을 두려워하나요?

김연웅 활동가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1. 질문의 맥락

❶ 여성혐오를 이용하는 정치

저는 '페미니즘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큰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페미니즘을 통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은 점점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피상적인 이미지만 떠올리거나, 일부 악용된 사례를 통해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합의를 이끌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페미니스트들을 괴물처럼 묘사하고, 안티페미니스트들을 2030 남성 전체의 대표인 것처럼 과대 표현하면서 '괴물들과 싸우는 구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민주적 대화와 협상 대신 여성에 대한 혐오를 이용해 정치적 사안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사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뿐 아니라 다른 소수자에 대한 혐오로도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기반을 훼손합니다.

❷ 군대의 불합리한 제도는 기성세대 남성의 산물

중요한 것은 남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라고 여기는 사회적 이슈가 사실은 여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군대 문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0대 초반 남성들이 군에 징집되면서 소중한 청춘의 시간을 잃고, 군대에서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이를 성차별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 시스템의 불합리함을 여성이 군대에 강제 징집되지 않는 데서 원인을 찾고, 여성을 탓합니다. 그러나 실상 군대의 불합리한 제도는 여성들이 아닌 기성세대 남성들이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남성들은 군대의 문제적 시스템에 대해 여성들의 '검은 시위'처럼 광장과 거리에서 모여 시위하고 집회하는 등의 정치적 행동을 취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군대 문제의 해결책을 여성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와 함께 불행해지게 하는 데서 찾기보다, 남성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조직화하여 변화를 만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남성 문제로서의 군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성 혐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2.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부 안티페미니스트 남성들이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하는 것, 둘째, 이념적 논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 셋째, 남성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세 번째 방안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입니다.

❶ 안티페미니스트 목소리의 과대 대표 방지

첫 번째 방안은 문제 해결이라기보다 태도의 전환입니다. 지속적으로 안티페미니스트들에게 마이크와 스피커를 제공하는 대신, 그것을 멈추면 됩니다. "함께 대화해 봅시다",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발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언론들이 조회 수를 위해 자극적인 안티페미니즘 담론을 확산시키면서, 이것이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비춰지게 되고, 이로 인해 건설적인 토론 자체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페미니즘이 단순히 여성의 권리만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4인 가구 모델의 실효성은 점점 떨어지고, 1인 가구는 2023년 기준 35.5%에 달하며, 전문가들은 2027년에는 40%를 넘어 가장 주된 가구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개인이 1인 가구로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결혼이나 파트너십을 선택할 때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임신·출산·육아를 결정할 때 사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등의 문제는 페미니즘의 중요한 의제이며,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 논의들을 무시한 채 "여성이 너무 많은 권리를 가져가는 것이 싫다"는 일부 극우적 청년 남성들의 목소리만 부각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❷ 실질적인 정책 논의의 장 마련

둘째, 우리는 합의 가능한 상식선에서 공론장을 열어 이 문제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두고 보이지 않는 유령에 대해 이야기하듯 추상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어떻게 일상과 시민들의 삶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조사 결과를 보면, 중년 여성보다 청년 남성의 성인지 인식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청년 남성들이 가부장제의 폐해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이 시스템의 피해자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표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 이 문제에 대해 진정한 공론장을 열어 토론한다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젠더 폭력, 사회적 고립과 관계 맺기의 어려움, 그리고 생애주기에서의 선택 문제 등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정치권이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대안 모색은 페미니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❸ 남성의 주체적 참여 확대

셋째, 남성도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젠더 폭력이나 관계 맺기 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한 '남성 달래기식' 정책이나 여성에게 "더 양보하고 참으라"는 접근은 절대 안 됩니다. 남성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화 시대의 남성 1인 생계 부양자 모델이 전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맨 박스(man box)'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에 맞게 남성상도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개인이 혼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함께 노동하며 아이도 키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합의를 정책으로 마련해야지, '이것은 남자가 원래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❹ 중장기적 교육 병행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시급한 과제에 더해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교 성교육 예산이 삭감되면서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이나 건강한 관계 맺기 등에 교육적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교사들에게 성교육 책임이 떠넘겨지면서 교사에게는 업무 부담을, 학생에게는 성교육 질 저하를 초래하여 모두에게 성교육에 대한 저항만 키우고 있습니다.

공공의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 효과는 높이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왜 방치하나요?

조소담 미디어 콘텐츠업 종사자
전 닷페이스 대표

1. 질문의 맥락

저는 독립 미디어를 운영하며 7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전하면서 우리 사회에 편견의 벽이 있다는 걸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문제 이전에 정치와 제도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지 않는 사회,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차별과 혐오는 '나중 문제'라고 치부해 온 정치의 잘못이 큽니다. 더 시급한 문제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 사람들 문제는 가장자리의 가장자리로 밀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치에서 시급하다고 말하는 인구 감소의 문제, 돌봄의 문제, 지역 경제의 문제 모두 이 사람들이 떠안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표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인권을, 이들이 당하는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표로 셈하고, 돈 되는 일인지 셈하면서 부화뇌동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가장자리에 선 사람들을 더 가장자리로 떠밀지 않는 정책을 만들 수 있나요? 차별금지법이 대선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정치적 리트머스지가 될 때, 애매하고 전략적인 답변으로 피해 가는 게 아니라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가장 앞선 자리에서 감당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중심에 두고 사회 문제 해결을 고민할 수 있습니까?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지 않는 사회,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가요?

❶ 여성 혐오

여성 혐오가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략적 언어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후 성평등을 바로 세우는 공적 기준들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계속 뒷선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들은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학교에서 성교육 성평등 도서 2500여 권이 폐기 처분된 사례도 있습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6년째,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응해야 하는 학교, 공공기관, 병원 등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차별과 혐오에 함께 대응하려는 공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❷ 장애인 차별

장애인 차별도 여전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이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차별의 말과 비난 또한 그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일상에서의 여러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국가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24년간 국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걸 '입법 부작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일하지 않는 국가, 차별 앞에서 게으른 국가를 이제는 정말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고 차별 앞에 게을렀던 나날 동안, 국민들은 당연한 일상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❸ 이주민 차별

이주민의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이주민이 5% 이상이면 다문화 국가라고 하고 올해 우리는 장기 체류 외국인 비율이 5%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포용적이고 평등한 관점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강태완 씨가 사망했습니다. 6살에 몽골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와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나온 분입니다. 26년간 미등록 아동으로 살다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가서 5년간 일하면 거주 비자를 준다고 해서 취업한 회사에서 일을 하다 재해를 당했습니다. 태완 씨의 사고는 사고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하고, 꺼리는 자리마다 이주민에게 선심 쓰듯 그 자리를 권하는 우리 정책의 문제입니다.

농촌 총각 장가를 보낸다며 비인권적 국제결혼 중계에 보조금을 대는 지자체 정책, 이주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랍시고 제공해도 합법인 이주노동 정책이 문제입니다.

2. 해결 방안

정치권은 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전략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소수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❶ 정치권의 자정노력 필요

평등, 포용을 위한 언어를 쓰고, 문제의 우선순위를 바로 보고 모두를 국민으로 대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❷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차별금지법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 아니라, 차별 행위가 일어난 이후 이를 바로잡는 사후적인 방법입니다. 공적영역에서 차별을 판단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기본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 EU에서는 가입 시 모든 국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합니다. 차별금지법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라는 말은 차별이 있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말입니다. 차별하고 싶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려는 말입니다. 이 법을 정쟁의 도구로 쓰는 정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 정책을 만들 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야 합니다. 매번 묵인하던 목소리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차별과 혐오로 방치되어 죽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전세 사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조정흔 감정평가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1. 질문의 맥락

지난 수년간 전세 사기(보증금 미반환)문제로 청년·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던 임차인 청년들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구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고장 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❶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임대차 방식으로 자리 잡은 전세 제도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자리 잡아 온 보편적인 임대차 방식입니다. 자본이 제조업 등의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던 경제 성장기, 개인(소매) 금융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금을 무이자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임차인은 매월 임대료 부담 없이 목돈을 맡겼다가 퇴거 시 반환받음으로써 주거 안정을 얻었습니다. 전세금이 자동으로 저축되는 효과가 있어 '주거 사다리'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전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해관계가 맞아 널리 활용된 제도였기에 유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세 시스템이 고장 난 이유가 무엇인지, 수년간 전세 사기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역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❷ 전세 사기 창궐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전세 제도는 오랜 기간 서민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만들어 온 임대차 제도입니다. 전세 제도에는 장래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 금융제도와 자금 조달 비용, 보증금 미반환시 채권 회수를 위한 회수 절차 등 많은 제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세 가격이 형성되고, 전세 가격은 다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명목으로 정부기금을 동원해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을 통한 전세 보증을 해 주면서 전세시장이 왜곡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 보증은 표면적·단편적으로는 임차인 보호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세시장에 국민들의 지불 능력, 즉 소득과 괴리된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게 만들었습니다. 전세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과 정부보증은 임차인들이 전세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약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낳았고, 때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결탁하여 사기 공범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풀린 정책자금은 전세 사기꾼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전세 가격과 집값은 모두 부풀려졌고, 서민들의 주거는 더욱 불안해졌으며, 정부기금으로 설립된 보증기관 HUG는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 즉 대출과 보증에 의해 만들어진 거품 가격을 서서히 빼야 합니다. 대출, 보증 제도를 정상화하고 대출과 보증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전세와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서서히 빼기 위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은 장기간에 걸쳐 시장의 충격과 부작용이 적은 방법으로,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2. 해결 방안

전세 사기가 창궐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있습니다.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공 관리 수단으로 전환하고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주택은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합니다.

❶ 전세대출은 민간 시장에 돌려주어야

전세대출은 민간은행의 금융상품이므로 정부보증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라 상품이 판매되도록 개입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정상적인 대출 프로세스에 따라 DSR, DTI, 원리금 분할 상환 등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전세대출은 결과적으로 전세 사기를 유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크게 해치는 약탈적 대출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제도의 설계로 인하여 많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들 또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전세대출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 전세대출은 임차인에 대한 대출이지만 임차인을 통하여 곧바로 임대인의 주머니로 갑니다. 전세대출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에서도 주택 경기 부양 정책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대출 규모가 36조에서 180조로 늘어나, 사상 최대로 폭증하였습니다. 저금리에 기반한 부동산 경기 확장기, 부동산 가격 폭등기와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한 전세대출은 전세 사기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세대출은 보증금 반환 채권에 기반한 기형적인 대출이므로 단계적으로 축소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보증이 아닌 시장원리에 따라 은행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LTV를 적용하고, 임차인 소득에 기반한 DSR을 적용하고, 원리금 분할 상환을 요구하는 등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신규 대출에는 원칙을 적용하고, 기존 대출도 단계적으로 정상적인 대출 기준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주로 청년 서민층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세대출을 축소하는 대신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들 수요층의 소득수준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적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소득과 여건에 맞는 주거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일반 부동산시장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정책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❷ 전세대출과 전세 보증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공 관리 수단으로 전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은 전세대출과 함께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공적보증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 스스로 위험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도덕적 해이에 빠트리고, 전세 사기를 창궐하게 만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또한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기능이 아니라 민간 임대차 시장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로 기능을 축소하고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값 대비 일정 비율의 한도를 정하고 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강제하면 임차인 보호와 민간 임대차 시장 관리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가 주택 가격의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되므로 공공기관 손실이 커질 염려가 없습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공공 조정제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의 노후 주택이나 불법 주택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 관련 보증에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하는 특수한 대출입니다. 담보대출과 달리 채권에 불과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만약 HUG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보증을 해주지 않았다면 은행은 전세대출 상품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대출 폭증은 정부의 무분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HUG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 시 채권에 질권 설정 절차가 생략되고 집주인 동의

의사도 필요 없고 집주인이 보증 기관의 연락을 피해도 수차례 통지한 기록만 있어도 대출이 실행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은 전세대출을 공공에서 보증하면서 민간 은행이 전세대출로 손쉽게 상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 특히 HUG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보증의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경우는 주택 임대 사업자로 가입한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 또는 임차인이 가입합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2024. 8.『서민 주거 안정 시책 추진 실태』에 따르면 연립 · 다세대주택의 경우 HUG 전세보증의 담보 인정 비율이 최초 도입 시인 2013년 70%였던 것을, 2017년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주택 가격의 100%에 이르는 무분별한 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전세 가격과 주택 가격을 올리고, 주택시장과 임대차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 따라서 전세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증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보증 비율을 조정하면 이와 연동하여 전세대출액과 주택 가격이 단계적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시장에는 보증이 없었을 때도 전세와 관련한 수요와 공급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가 100% 보증을 해 주지 않으면 전세로 들어가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정상적인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회귀할 것입니다. 당장은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정상화를 위해 일시적인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하여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주택시장과 임대차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과 임대료가 정상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되, 민간 임대차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보증보험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예를 들어 L/V 또는 공시 가격 등)의 한도를 정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고,(이는 의무적으로 모든 민간 임대 사업자들에게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경실련의 공식 입장은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인 의무 가입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계약 만료 등 요건이 갖추어지면 보증금 미반환 시 일정 비율의 보증금 일부 금액에 한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다 넓히게 됩니다. 임대인에게는 자연스럽게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일부 보증 금액에 대한 보증금 반환 대출이 됩니다. 보증금 전액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보증 및 우선 변제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HUG를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통하여 관리하는 주택의 숫자, 규모에 따라서 HUG의 조직 규모로 관리가 가능한지 점검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부분은 LH공사 등의 조직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❸ 서민을 위한 저렴한 장기 공공주택은 정부가 직접 공급

정부는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로 해소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월세로 공급하는 것이 진정한 주거복지정책입니다. 불안정성이 큰 대출에 기반한 이자의 형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 수단으로서 저렴한 월세로 공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것인지 제도 정비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강제수용을 통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한 분양 수입에 기대어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정부가 투기시장을 더 확대하고 조장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국민들이 투기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 주거복지를 해친다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되, 재원 마련 수단 또한 투기 심리를 잠재우면서 토지 공공성에 기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현재 주택시장은 투기 시장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1주택 실수요도 철저하게 투기 심리를 동반합니다. 주택시장에서 투기 심리를 빼놓고는 시장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사고파는 일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매할 것인지 전세로 거주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에도 투기 심리가 동반됩니다.
- 1주택자가 실수요자라는 말은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1주택자이지만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인 사람도 많습니다. 1주택자로서의 지위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 되어,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전세 지원제도는 투기에 활용됩니다. 중장년들의 경우는 생애주기에 따라 집을 늘려 가면서 저축하듯 한 채씩 주택을 매집한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으로 자산이 몰리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부동산에 모든 자산을 묻어 둔 이들의 투자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인식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분법,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프레임,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라는 단순 논리에 따라 어설픈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에 접근했다가는 큰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바로 전세 사기문제가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입니다.
- 주거복지와 주택시장정책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간 부동산시장, 주택시장이 왜곡된 것은 과도한 정부 지원과 정책 때문입니다. 주거복지, 주거안정의 탈을 쓰고 민간 건설사를 지원하는 정책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켜 왔습니다.
- 주택시장은 시장원리에 따라 정상적인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놔두어야 시장의 산업생태계가 건강해집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주택정책과는 별개로 주거복지정책을 통하여 구현해야 합니다. 폭넓은 주거 지원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정부가 본연의 역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수단 또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공공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통하여 확보한 택지는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고,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에서 높아진 용적률 등을 통하여 생기는 분양 수입 등의 개발이익은 공공주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 노후 저층 주거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공간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주거지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거주자들의 소득수준·주거 형태·생활 패턴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거주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 토지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비거주자, 비사업용 토지, 상속 토지, 공유지분 토지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적게 주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공공이 개입, 우선 매수권 등을 활용하여 확보하고,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김진규 교수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1. 질문의 맥락

현재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수집한 영상 정보 속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익명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❶ End to End AI 모델을 적용하여 업계를 이끌고 있는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은 기존의 자동차 OEM 및 부품 업체들이 따르고 있던 룰 기반 방법론 면에서 한계를 맞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화웨이, 모멘타 등)이 자율주행 SW에 End to End AI 모델을 적용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의 서비스 영역 확장(고속도로→도심)과 예기치 못한 상황(edge case)에 대한 대처 능력 측면에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 또는 국가 간 자율주행 시스템의 상품성 또한 격차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국내 OEM이나 자율주행 개발 업체 역시 End to End AI 모델을 이용한 자율주행 SW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모델의 성능을 육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인 영상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❷ 규제로 인한 국내 자율주행 원본 영상 활용의 한계점

국내에서 자율주행 영상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5조의2)에 따라 모든 영상 정보에 포함된 보행자의 얼굴, 자동차 번호판에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를 하여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End to End AI 모델의 학습에 활용되는 영상 정보를 오염시켜 이를 이용한 자율주행 SW의 성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시 '자율주행 원본 영상 활용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규제 샌드박스에서 요구하는 안전 조치는 현실적인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수 안전조치의 일부입니다.

필수 안전 조치	현실적 제약 사항
영상 정보 원본은 외부망이 차단되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이하 '분리 공간')에서 처리해야 한고, 그 외 장소에서는 가명 처리(비식별화)된 상태의 영상 정보를 처리해야 함	자율주행 SW 개발 인원이 다수일 경우, 분리 공간 구축 및 관리는 비현실적
영상 정보 원본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저장 매체 포함) 및 전송 암호화해야 함	영상 정보 원본의 저장 및 활용을 위한 암호화와 복호화에 대한 리소스 (인프라, 시간) 투입이 과도함
접근권한을 최소화(10명 이내)하여 개인별로 설정하고 처리 내역 보관해야 함	원본 영상 정보에 접근하는 인원을 최소화하여 관리할 경우, End-to-End 데이터 기반 개발 방법으로의 개발 방향 전환 시, 인원 활용 관점의 제한이 발생함

이로 인해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자율주행 업체들은 AI 모델의 개발 과정에 원본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자율주행 원본 영상을 취득하고 보관하는 목적으로 활용 중입니다.)

또한 현재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는 2년간의 '일시적인' 예외 허용일 뿐이라는 점도 자율주행 원본 영상 활용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촬영된 영상 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해당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❶ 영상 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법령 개정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촬영된 영상 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기한이 한정된 실증 특례가 아니라, 충분한 기간 동안 자율주행 원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관련 입법안 추진이 필요합니다.
- 법령 개정 완료 전까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요구 사항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현실화도 병행해야 합니다. 물리적 분리 공간 구축, 원본 영상 정보 암호화, 접근 인원 최소화 등의 보호 조치는 자율주행 개발 측면에서 현실적인 조치가 되기 어렵습니다. 영상 정보의 물리적·논리적 보안 조치, 영상 정보를 다루는 인원들에 대한 서약서 작성, 주기적인 교육과 관리 등 현실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❷ 개인정보 유출 시 업체 책임 강화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 개인정보 유출 시 해당 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현실화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운영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업체가 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및 법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로써 업체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 현장 외국 인력, 무엇이 문제인가요

최은정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 질문의 맥락

합법 외국 인력의 체계적 관리 체계 미흡 및 불법 외국 인력의 만연이 문제입니다. 외국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❶ 건설 현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

청년층의 건설산업 기피로 건설 현장의 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2024년)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51.8세, 평균 진입 연령은 39.4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감소로 이어지는데 건설업(96.8)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105.6), 서비스업(113.4)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❷ 건설 현장 내 외국 인력의 증가

이는 건설 현장 내 숙련 인력의 부족 및 외국 인력 증가로 이어져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커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건설업에 취업 중인 외국 인력은 총 42만 2765명으로 이 중 합법 외국 인력은 17만 9852명(방문취업(H-2) 2만 2077명, 재외동포(F-4) 12만 2008명, 결혼이민(F-6) 2만 3390명, 비전문 취업(E-9-2) 1만 2377명), 불법 외국 인력은 24만 2913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특히, 불법 외국인 근로자 수는 합법 근로자 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토교통부(2022) 설문조사 결과, 외국 인력의 직종으로는 철근공 44.3%, 조적공 40.0%, 형틀목공 37.6%, 타일공 40.0%, 콘크리트공 29.2%를 차지해 주로 철콘과 실내 건축 업종에 외국 인력 분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에서 건설 현장 내 외국 인력 부족 시 공사 기간에 부정적 영향이 생긴다는 의견이 85.3%를 차지해 외국인 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응답 업체의 48.6%가 불법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다고 답하였습니다.

❸ 건설 현장 내 외국 인력과의 의사소통 문제

건설 현장 내 외국 인력들은 현장에서 언어소통 장애, 적응 등의 문제로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 건설 현장 내 외국 인력은 중국,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내 의사소통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현장 내 외국 인력 증가와 소통의 장애는 사고 사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건설업 사고 사망자 연평균 412.2명 중 외국인이 47.8명으로 11.6%를 차지하였습니다.
- 특히 2021년 이후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사망은 증가해 2023년 기준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국 인력은 현장에 진입하기 전 의무적으로 받는 기초 안전보건교육 외에는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건설 현장의 외국 인력은 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를 받고 현장에 유입되고 있어 체계적 교육 훈련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 관리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숙련된 외국 인력 양성 한계, 산업 이탈, 불법 외국 인력의 증가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위협이라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2. 해결 방안

외국 인력 활용성 제고를 위한 관리 체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❶ 합법 외국 인력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저출산 시대, 외국 인력의 유입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타 산업에 비해 고령화가 심각한 건설업은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2024)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건설 현장의 기능 인력은 매년 3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 진입하는 외국 인력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질의 외국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먼저,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 및 품질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비숙련 인력(E-9) 특화 교육 대상에 건설업은 제외되어 있어 외국 인력의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숙련 인력(E-9)을 대상으로 교육원 등과 연계하여 건설 분야 외국인력 대상 공종별 특화 교육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교육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외국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또한, 입국 전·후 안전교육 확대, 기초 안전교육 이해도 제고, 건설업 맞춤 교육 등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비언어적 자료 제작·배포를 지속 확대하고 기존 인력과 앱을 활용한 통번역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기능 등급제와 연계해 외국 인력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일례로 특정 활동(E-7)비자 중 건설업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E-7-1) 및 숙련 기능 인력(E-7-4) 비자를 소지한 외국 인력 확보와 동시에 이들에 대한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일본의 경우 건설업 커리어 업 시스템(Construction Career Up System, CCUS) 내에서 외국 인력에 대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현장에서 불법 외국 인력 유입 차단 및 합법 외국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설 현장 내 내국 인력과 외국 인력을 동일한 시스템 내에서 관리해 이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❷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비자 신설 검토

중장기적으로는 어업(E-10 비자), 농·축산업(E-8 비자)의 사례처럼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E-11(가칭) 비자의 신설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현행 외국인 대상 비자(예를 들어, E-9)가 주로 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현장 간 이동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건설 분야에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관련 비자로 유입되는 외국 인력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❸ 불법 외국 인력 관리 강화

불법취업에 대한 점검 강화 및 정보 수집 체계화를 통한 불법취업 저감을 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건설 현장 집중 점검, 건설업 고용 허가 사업장 점검 시 불법취업 점검 등을 해야 합니다.
- 또한, SNS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취업 홍보·정보 제공 알선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 수사 강화를 해야 합니다.
- 건설 현장 내 외국 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유입과 관리 강화는 불법 외국 인력의 차단과 동시에 산업 내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질의 외국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협회 및 단체 II

‘협회 및 단체 II’는 중앙행정부에 등록된 34개 비영리단체 및 전문가단체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에 대해 던진 질문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온라인 폼으로 수집된 이 질문들은 단순한 이해관계 표명이 아닌, 사회 전반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묻는 진지한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수는 줄고 복지는 늘리는 나라가 가능한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없을까’처럼 일부 질문은 단체의 고유 활동과 오랜 축적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또 다른 질문은 국가 운영의 기본 철학과 시스템을 향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확장됩니다.

이 기획의 의의는 각 단체가 단지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을 함께 설계하려는 시민사회의 정책 주체임을 드러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편적인 민원 수준을 넘어, 전문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한 시대의 중요한 목소리로 기록되었습니다.

1	우리의 탄소중립 정책은 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한국무역협회
2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벤처기업협회
3	차별 없는 사회,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나라살림연구소
5	세수 감소와 복지 확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한국세무사회
6	삶의 벼랑끝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 특고노동자, 하청업체노동자, 알바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
7	국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8	배달 앱 플랫폼사들의 일방적 횡포에 외식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데 이제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9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 및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10	중소 벤처기업은 자신들이 가진 특허와 관련하여 침해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면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포기해 버리는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外 1건	대한변리사회
11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에 힘쓰는 기업의 기술개발 인력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2	서부지법 폭동, 광화문의 극우 집회의 폭력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
13	장애 어린이는 왜 치료에서, 교육에서, 돌봄에서 차별받아야 합니까?	(사)토닥토닥
14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 교통이 안전한 나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일상이 안전한 나라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손해보험협회
15	쇠퇴하는 농어촌 및 소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건축적 해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外 2건	대한건축사협회
16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17	자녀를 양육하는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부모에 대한 활동 지원사 법제화(자녀 돌봄 지원)가 필요합니다.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18	양서를 통한 올바른 민주시민교육,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위한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어린이도서연구회
19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당시의 투기 억제에 집중한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기조 변경을 고려하고 있나요? 外 6건	대한주택건설협회
20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산재보험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희망간병
21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요?	대한건설협회
22	하도급 공사의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대한전문건설협회
23	초고령사회 돌봄 서비스의 중심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外 1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24	노인 돌봄·건강 정책에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 강화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外 2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25	공공 건설공사만이라도 건설노동자 임금, 장비 대금 직접 지급을 전면화해야 합니다.	타워크레인모꼬지협동조합
26	예술인들의 처우와 재정적 지원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한국음악협회
27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금전, 부동산 등 재화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한국공예예술가협회
28	단절된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복원시키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야 할까요?	등대복지회
29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지독한 편견과 차별, 학대와 인권침해에서 해방되어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30	열악하고 위험 산업현장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도 아프면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31	헌법에 명시된 독립 정신을 어떻게 구체화할까요?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32	이제 청소년 정책의 뿌리가 필요합니다.	(사)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
33	'식품 접객 업소용 물티슈'는 환경오염 물질이며,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한국위생물수건처리업중앙회
34	현재 비대면 진료는 민간기업 플랫폼을 통해 안전관리가 도외시된 채 피부, 미용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본래 목적인 의료 사각지대 보완 역할을 수행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外 1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한국무역협회

우리의 탄소중립 정책은 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세계 주요 국가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저탄소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급망의 변화 속에서 국가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을 지속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탄소중립 지향점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이라는 '규제' 중심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지향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규제보다는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을 재정립하고 기술개발 지원 예산 확대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하여, 탄소 배출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벤처기업협회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벤처기업 지원 정책은 그간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의 해결 방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정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벤처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고, 지난 28년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벤처생태계 기반이 조성되었고, 벤처생태계는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벤처생태계는 기술창업의 감소, 벤처 투자시장의 위축, 혁신성 저하로 인한 경쟁력 약화, 회수 시장 침체와 더불어 규제 장벽, 노동 경직성,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 등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을 통한 벤처생태계의 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벤처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제1 어젠다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첨단 업종 벤처기업을 육성, 혁신 금융의 확대 및 제도화, 우수 인재 확보 및 근로 제도 선진화,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등의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차별 없는 사회,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극단화된 양당정치의 폐해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포용과 화합은 없어지고,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가 만연합니다. 보편적인 상식과 원칙은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 무력하기만 합니다.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차별과 혐오, 비상식과 부정의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상생과 화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해결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고민이 절실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한 발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자 정 전 총리가 '기재부가 정부 내 저항 세력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을 하며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기재부가 가진 막강한 권한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국가 시스템은 법과 예산입니다. 이는 헌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헌법 제52조, 제54조, 제61조에 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으로서 국회에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국정감사라는 3가지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본 원리입니다.

정부에서 법과 예산을 담당하는 기관은 사실상 검찰과 기재부와 감사원입니다. 우리나라가 행정 중심 국가이다 보니 이 3가지 기능은 각 기관에 독점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검찰은 기소권, 기재부는 예산편성 권한, 감사원은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 감사는 여러 기관이 일부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인사를 통해 어느 정도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기재부의 권한은 다릅니다. 국가 운영의 상당 부분이 이들의 결정으로 인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세수 감소와 복지 확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1993년 30조 원 수준이던 내국세 수입이 2021년 400조 원까지 증가했으나, 이후로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정 수요를 맞춰야 하니 결국 적자국채가 계속 발행되고 있고, 높은 금리와 원달러환율, 고물가로 최근에는 한계기업들의 도산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삼성과 같은 GDP를 지지하던 기업마저 무역 전쟁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정지출을 통해 서민층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높은 3고를 잡기 위해서라도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감세(자본이득, 상속)와 관련된 정책만 경쟁적으로 내놓을 뿐,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대안이 필요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 고착화로 인해 삶이 더 피폐해지고 어려워져 삶의 벼랑끝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 특고노동자, 하청업체노동자, 알바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 고착화는 여러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외환위기와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요인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에 따라 경쟁 시스템을 급격히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는 적극적인 노동 3권 행사로 근로조건을 유지·강화시킬 수 있었던 반면, 그렇지 못한 노동자의 처우는 악화되었습니다.

둘째로 산업구조의 변화입니다. 산업의 고도화, 서비스화, 정보화로 인해 중간 임금대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저임금 및 고임금 일자리가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셋째로 사회적 요인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비정규직의 비중을 높여 이중구조를 심화시켰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해야 할 교육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넷째로 우리 사회 고질적인 원하청 구조의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평한 하청 관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중구조를 심화시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국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성장잠재력 하락의 요인은 인구구조 변화와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달 앱 플랫폼사들의 일방적 횡포에 외식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데 이제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간 가맹점주 여러분들은 '배달의민족'이 이용료를 올리면 올리는 대로, 변경하면 변경하는 대로, 앱 화면을 바꾸면 바꾸는 대로 따르기만 했습니다. 주문을 1건이라도 더 받아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보다 배달앱 이용료가 더 빨리, 더 높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배달 앱 이용료 인상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졸속으로 합의한 상생안 때문에 외식업계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가 수수료 개편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해결한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이던 수수료를 매출 규모에 따라 0.5%에서 1.5% 범위로 대폭 인하시킨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달 앱 이용료도 신용카드 수수료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배달 앱 이용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경제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한다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배달 앱들이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정책 변경 시 가맹점주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협상권 강화와 투명성 확대를 보장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지금까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중소 납품업체 간의 문제 해결 정책은 규제 중심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화합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 및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통산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므로, 참여자가 서로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의 상생 협력,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의 상생 협력은 유통산업의 질적 발전과 지속 성장을 위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유통산업 내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아래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 오프라인 유통 부문 중심의 상생 정책을 온라인 유통 부문의 상생 협력 정책으로 확대 및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이 유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으나, 유통 상생과 관련된 법, 제도, 정책 등은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되어 있어 온라인 유통 부문의 상생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유통이 중소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와 상생 협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예시: 유통산업발전법에 온라인 유통과 중소 유통업체 및 중소 납품업체와의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근거 마련 등)

둘째, 중소 납품업자 보호 및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취지는 거래상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중소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이하 납품업자 등)을 보호하는 데 있으나, 현실은 대기업 납품업자나 해외의 유명 납품업체 등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자유시장 경쟁이 저해되어 유통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 납품업자 보호 및 중소 납품업자와의 거래 효율화, 상생 협력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 대상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의 적용 범위를 중소 납품업자로 한정할 경우 대기업 납품업자와의 거래가 시장경제 기반으로 효율화되어 소비자 후생 증진, 소비 진작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소 벤처기업은 자신들이 가진 특허와 관련하여 침해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면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포기해 버리는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2년 7월 17일「파이낸셜뉴스」가 국내 기업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IP 관계자 9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IP 분쟁 경험이 있는 607명 가운데 83.3%가 소송을 포기한 경험이 있었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소송 포기 경험이 있는 기업이 전체의 87.8%로 90%에 육박했습니다. 소송을 포기한 이유로는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6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랜 소송 기간(48%), 대리인 선임의 어려움(38.2%) 등이 꼽혔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변리사를 특허침해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기에 특허침해소송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과학기술계, 산업계 전반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였고 '과학기술인이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업, 발명가, 연구개발자 등 모두의 바람을 담아 변리사법 제8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벤처기업협회도 '기술 패권 시대, 혁신·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특허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현재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특허법원(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불복), 대법원(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에서 소송대리 중이나, 사실상 사건의 쟁점이 동일한 특허침해 사건에는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에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리인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온 것입니다. 17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 왔고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국(일본, 중국, EU, 영국, 대만)들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허용하여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과학기술계, 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특허침해소송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변리사를 특허침해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 제8조를 개정 작업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특허침해를 당해도 소송할 엄두가 나지 않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특허 출원 4위의 출원 대국입니다. GDP 및 인구 대비 출원 수로는 전 세계 1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특허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특허보다 쓸모없는, 이른바 '장롱 특허'가 많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 패권 시대에 특허는 기업 발전의 핵심 원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겐 특허가 오히려 기업 경영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허 보호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침해가 발생하면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형 로펌의 독과점으로 인해, 억대의 착수금을 들여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확률은 11.9%(2023년)에 불과하며 소송 기간 1심 판결에만 2년 여(673.8일)가 소요됩니다. 설령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1억 원(2016~2020년 중간값)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 건수가 해마다 줄어 2023년에는 59건에 그친 것은 이 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 과학기술계는 20여 년째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법안이 지난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5번이나 발의됐지만 변호사 단체의 반대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해외 주요국에서 너도나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업과 국가의 이익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산업 분야에서 R&D에 힘쓰는 기술개발 인력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R&D 인력은 60만 356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전체 R&D 인력 중 민간 부문 종사자는 약 78%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 현장에서의 기술혁신 역량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임을 보여 줍니다. 이처럼 기술혁신의 중심에는 산업현장에서 R&D에 매진하는 기술개발 인력이 있으며, 이들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평가와 대우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술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고와 전문성이 사회적 존중이나 보상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는 국가경쟁력 확보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기술인의 성과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실패조차도 다음 도약의 자산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개발 인력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소통 구조도 중요합니다.

선진국들은 기술개발 인력의 위상을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과 사회적 우대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개발 인력을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주역'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절실합니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서부지법 폭동, 광화문의 극우 집회의 폭력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부지법 폭동과 광화문의 극우 집회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나와 다른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극대화되고 집단화되어 나타난 현상입니다. 윤석열과 그 비호 세력이 인권과 존엄을 경시하던 모습이 이제는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극우 폭동을 선동하는 집단은 여성을 비하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고,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길의 선두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우 폭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 거듭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 11조에 명시된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국정과제였을 정도로 늘 중요한 법안이었지만 번번이 '나중에'라며 미뤄져 왔습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물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정부는 결국 반인권적 불법 계엄을 자행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반민주적 흐름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토닥토닥

장애 어린이는 왜 치료에서, 교육에서, 돌봄에서 차별받아야 합니까?

장애 어린이의 보호자는 학령기가 되면 치료와 교육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둘 다 필요하지만 사회 시스템상 양쪽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아동은 집중 재활이 필요해 병원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고 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교육을, 학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중증장애아동을 받아 주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이 의무적으로 다녀야 할 학교도 이들을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아동정책과 장애인정책을 내놓지만 장애아동 관련 내용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성인 장애인이나 일반 아동에 비해, 장애 어린이는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치료와 교육, 돌봄 영역 전반에서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의 개선과 더불어 장애아동을 중심에 두는 치료, 교육, 돌봄 통합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손해보험협회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 교통이 안전한 나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일상이 안전한 나라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교통안전은 선진국수준에서 많이 미흡합니다. OECD국가 38개국중 28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안전, 통학로 스쿨존 아이들의 안전 생애주기별 교통안전교육과 안전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것입니다. 교통이 안전한 나라 건강한 나라를 원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물을 통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 건축 전문 인력을 어떻게 지원하고 확보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건축 환경은 개발 중심, 경제성 우선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건축물이 탄생하기 어려우며, 공공 건축에서도 건축사의 창의성 발휘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건축사보다는 시공사 중심 구조이기에, 창의적 설계보다 공사비 절감과 빠른 시공이 우선시되어 독창적인 건축을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내 건축사들의 해외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하고, 대형 공공건축물 프로젝트마저 해외 건축가에게 일임되는 실정입니다. 프리츠커상과 같은 국제 건축상이나 해외 건축 언론을 보면 한국 건축사의 입지가 협소하며, 국제적 평가와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의 건축사들은 서양의 건축 매체, 전시, 학회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 선진 국가(추가 교육 또는 실무 경험을 통해 자격 취득 가능)와 달리 우리나라의 인증 5년제 필수 이수 기준은 건축사 취득 과정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4년제 대학 졸업생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건축사 사무소는 만성적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저임금으로 인한 청년층의 취업 기피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제한으로 인력 유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쇠퇴하는 농어촌 및 소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건축적인 해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농어촌 및 소도시 쇠퇴의 원인으로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기반시설 부족 및 생활환경 악화, 주거 환경 및 빈집 문제, 지역경제 침체 및 공동체 약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로 인해 경제활동 위축, 도시 기능 저하, 빈집과 노후화된 시설 증가, 사회적 고립 및 커뮤니티 붕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도심 주택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건축적 해법이 있을까요?

엄격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은 신규 주택 공급을 제약합니다. 이 때문에 도심 내 주택 가격이 급등하여, 젊은 층과 서민의 주거 안전성 저하 및 주거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은 임대료 상승을 초래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며,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낮은 용적률 제한은 재개발을 저해함으로써 노후 건축물 방치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를 가속화하며,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려 기업 및 인재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불법 증축과 편법적 리모델링 등 탈법적 개발 방식을 조장하고, 도시 슬럼화 및 미관·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 용적률 제한은 도심 내 토지 및 인프라의 최적 활용을 제한하여 공간 효율성을 저하하고, 출퇴근 인구의 외곽 환산을 초래하여 교통난을 심화시킵니다. 또한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개발 수익 감소로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있으며, 기업과 투자자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아닌 폭설, 폭염, 가뭄 등으로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세계 경제 피해액이 1조 3000억 달러(세계은행)라고 합니다. 매년 극한 기후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500만 명(모니쉬대학)이며, 2020년 자연재해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액은 1조 3000억 원(행정안전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으며, 열대야·황사·미세먼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기후는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생태계 변화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32.8%의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 부분에서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체 건축물 에너지 사용 중 냉난방·급탕 등 기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는 연간 약 25조 원 정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겨울에 따뜻해야 하고, 여름에 시원해야 하며, 화장실에서는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나와야 하고, 주방과 화장실·욕실에서 사용한 물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위생, 냉난방, 급수·급탕, 오·배수 등에 쓰이는 설비를 기계설비라 합니다. 기계설비 분야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한다면 100만kW급 발전소 최소 1~3개 정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실외보다 실내가 안전한 이유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깨끗한 공기를 불어 넣는 공기조화설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맑은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비롯해 비료 공장, 반도체 공장 소각로 등의 생산시설도 기계설비 영역입니다. 인체에 비유하자면 순환계, 소화계, 신경계를 합친 것이 기계설비입니다.

사람은 아프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를 통해 몸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에 설치된 다양한 기계설비들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을 점검하고,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하면 쾌적한 환경은 물론이고 건축물의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처음 기획했던 대로 시공되고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만,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의 성능은 높이고 에너지 과소비는 줄여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한 생활 밀착형 법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공사의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기계설비 성능 점검 등의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분야는 적합한 설계 및 정밀 시공을 통해 에너지의 과다한 낭비 요인을 없애고,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꾀함으로써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첨병이 되겠습니다.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자녀를 양육하는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부모에 대한 활동 지원사 법제화(자녀 돌봄 지원)가 필요합니다

저희 단체는 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양육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의 위기·임신·출산·양육 상담과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주거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위한 교육, 인턴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양육 미혼모·부와 청소년 부모, 그리고 그 자녀가 자립하기까지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고딩엄빠〉로 잘 알려진 청소년 부모·자녀의 양육비 지원을 법제화하기까지 최초 실태조사와 국회 토론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양육 미혼모· 부와 청소년 부모를 만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느린 학습자 부모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대처 능력이 떨어져 자녀가 위험에 처할 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직 관련법이 없는 상황으로, 이 문제가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느린 학습자 관련 제도는 교육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지자체 조례 정도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제보로 2024년에 입법 조사처 연구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이 조속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양서를 통한 올바른 민주시민교육,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위한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양서를 금서로 둔갑시키고 도서관에서 대출을 금지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헌법을 위배하는 독서정책, 교육정책을 펴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책을 읽고 자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독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걱정하면서도 여전히 입시 위주, 경쟁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베' 등 극단적 사상을 전파하는 커뮤니티, 식민사관 등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바람직한 독서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 실현이 필요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당시의 투기 억제에 집중한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기조 변경을 고려하고 있나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과 등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정책을 반복한 결과 풍선효과에 따른 집값 급등 및 지역간 불균형 초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정책은 안정적 공급 기반 위에 정상적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은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 건설사업 시 교육청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학교용지법에서는 사업 주체가 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교육감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환경보호법에서는 교육 환경 보호 구역 주변의 개발사업 추진 시 교육 환경 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 동의를 조건으로 주택 건설 사업자에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학생 수요를 과다 산정하여 실제 학생 수요 이상의 교실 증축 등을 요구하고, 사업 주체가 입주 시점의 실제 학생 수요를 바탕으로 기부채납 수준의 재협의를 요청하더라도 기존 협약 이행을 강제하고 있어 기부채납 적정 수준에 대한 논쟁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발사업과 관련한 교육청 기부채납의 적정 수준을 마련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부채납 재협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현재 주택법 통합심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제도상 미비점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데 제도도입 취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주택법에 따른 통합심의가 2024년 7월 17일 시행되었으나, 개별 법령에 따른 제한적인 통합 심의가 여전하여 정책 보완을 통한 제도 도입 취지 제고가 필요합니다. 주택사업자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자체에 통합 심의를 요청하더라도, 지자체 내에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통합 심의 관련 매뉴얼 부재로 제도 집행에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교육환경 평가, 재해 영향 평가 등 타부처 심의를 포함하지 않아 통합 심의 도입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민주당이 펼쳐 온 주거 안정 대책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비축 확대 등으로 공공의 역할 강화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정책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며, 민간 부문을 적절히 활용해야 서민용 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주택 도시 기금 마련 및 세제 개편 등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현실화 계획이 있을까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정기 고시되어 공사비 등의 변동 요인이 반영되는 반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 건축비 고시는 비정기적이어서 공사비 등의 변동 요인 반영을 기약할 수 없고 인상 고시를 하더라도 현실화 면에서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표준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민간 아파트 공급 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고 기본형건축비와 마찬가지로 정기 고시하여 공사비 등의 변동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입주자는 하자를 보수하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 가는 실정입니다. 하자를 실질적으로 보수하여 입주자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에서 하자의 정의, 판단 기준, 하자보수 방법 등에 대해 기준을 만들었으나, 재판상 규범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준에 입각한 실질적인 하자보수보다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하자 판정 기준이 재판 규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현재 주택시장에는 미분양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 문제가 향후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미분양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고 미분양 물량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17개월 연속 증가하여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미분양으로 분양 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PF 원리금 상환이나 공사 대금 지급도 불가능해져 주택사업자는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시공사, 하도급업체뿐 아니라 인테리어업, 이사업 등 연관 산업에까지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실수요자마저 주택 구입을 기피하면서 시장이 자체적인 회복 능력을 상실한 상황인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희망간병

유, 무료 직업소개를 통해서 병원에서 간병사로 일하는 노동자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산재보험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간병사들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병사들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것이고, 산재보험 적용도 당연히 못 받습니다.

그러나 현행 산재보험 관련법에는 이미 산재보험 특례가 마련되어 있어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라이더 등), 해외 파견자, 현장 실습생, 학생 연구자 등 다양한 특수고용 형태의 노무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유, 무료 소개 업체를 통해 국립대 병원에서 간병사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의료기관 간병사는 최대 24시간 근무 등 노동시간, 노동형태, 근로조건 등에서 어떤 보호도 못받는 완전 사각지대 노동자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병원 간병사는 간호-간병서비스가 확산되더라도 필수적인 인력입니다. 추산 7만~20만명 정도로 파악되는 간병노동자들은 다른 병원 종사자들과는 달리 전염병 예방접종, 감염예방, 산재 등에서 완전 제외되어 자부담으로 근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여야 합니다, 일괄 적용이 어렵다면 유, 무료 직업소개소를 통한 파견의 경우부터라도 최소한 법적용을 통해 고령화시대 필수 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합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유령 노동을 계속 하는 것은 반인권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출생률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도시화와 양극화의 심화,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로 인해 건설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요?

1960년대에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과 건설산업을 경제발전의 초석으로 삼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 시대별로 경제성장을 이끈 산업은 변화했지만 건설산업은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인 생산 인프라를 제공하며 국가경제의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현재에도 건설산업은 여전히 국내 산업의 13%를 차지하며, 취업 유발 인원은 34만 명에 이릅니다. 건설산업은 21세기의 주력 산업은 아니더라도 국내 경제에서 변함없이 핵심 역할을 담당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의 자재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건자재 가격 급등, 부동산 경기 침체를 거치면서 거치면서 2020년대 초반부터 주택, 인프라 등에 대한 대형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졌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건설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은 지난 10여 년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고, 특히 노동생산성 면에서는는 다른 산업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젊은 인재 유입 감소로 건설산업 노동력이 고령화된 것이 원인입니다. 또한, 건설산업을 규정하는 제도가 복잡해짐에 따라 비효율성 증가와 생산성 저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신기술 출현 등으로 급격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설산업은 각 현장이 별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표준화가 어렵고 타 산업에 비해 기술 투자가 저조합니다. 타 사업은 첨단기술로 인해 큰 변화가 예감되는 시점이지만 건설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 생산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건설산업의 안전사고, 생산성 정체, 기술 역량 부족은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관련 규제를 강화시키고,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막아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건설산업의 고령화와 인재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 공사의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도급 공사에서도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하수급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하수급인은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를 책정해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며,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하수급인이 따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조치가 미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현재 법적으로 하도급 공사의 안전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하수급자가 충분한 안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하수급자가 계상받은 안전 관리비는 기본적인 안전 보호구를 구입하는 것만으로 소진되고 있으며, 부족한 금액은 대부분 하도급자가 자체 부담하고 있어 적극적인 안전 관리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업 현장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건설 현장 안전 관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건설공사 계약 시 현실적인 안전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초고령사회 돌봄 서비스의 중심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초고령사회 돌봄 서비스계의 중심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욕구가 높아져 가고 있으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300만 명이 된 시대에 요양보호사 수급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저평가받고 있고, 요양보호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절실합니다. 요양보호사를 대변할 법인 단체를 통해 요양보호사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일한 만큼 대우받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기보다 외국 근로자를 유입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요양보호사의 사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합리적 처우, 권익 보호,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를 대변하는 법인 단체를 조속히 설립함으로써 요양보호사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요양보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돕고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지만 정작 요양보호사는 사회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이직하는 요인이 됨은 물론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악영향을 미칩니다. 요양보호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구강건강 관리로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이자 병원 치료의 원인인 흡인성폐렴과 치매, 각종 만성질환의 발병과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는데, 노인 돌봄·건강 정책에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 강화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치주질환은 심혈관계질환, 고혈압, 당뇨병, 류마티스성 관절염, 만성 신장질환, 골다공증 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강건강을 회복하면 영양 섭취가 원활해짐은 물론, 전신 건강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60세 이상 노인이 음식을 잘 씹지 못하면 치매와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장기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이자 병원 치료의 원인으로 알려진 흡인성폐렴은 구강건강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협회가 2023년 인천 서구의 주간 보호 센터 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6주간 '방문 구강관리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구강위생지수와 설태 지수가 상당히 감소하였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90.9%를 기록하였으며, 삶의 질 또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강건강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노인의 치태 내 구강 미생물은 흡인성폐렴 환자의 폐에서 발견되는 미생물과 동일합니다. 138명의 장기요양 시설 환자들 중 89명의 치태에서 폐렴 유발균이 발견됐습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여성이 대부분인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11만 명 중 절반도 안 되는 인력만이 활동하고 있는데 치과위생사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일·가정 양립 방안은?

여성이 99%를 차지하는 치과위생사는 2025년 현재 면허자 수가 11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활동률은 약 47%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지속적인 인력 공급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의 이·퇴직과 경력 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치과 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치과 의료의 질 저하와 사회적 비용 손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은 치과 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한으로 구강건강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소득 가구,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구강건강 전반의 유병률이 높고 치과 진료 접근성이 낮습니다. 저수가로 인해 일반 치과에서는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적·보존적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구강보건사업의 일관성이 저하·축소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로 지자체(보건(지)소)가 수행하는 건강관리 사업이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자체가 14개 사업 영역의 우선순위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사업량을 선택하며 재원의 용도와 세부 내역을 설계·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수는 인구 10만 명당 치과의사 0명~5.27명, 치과위생사 0.55명~3.15명으로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구강보건사업을 후순위로 미룸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던 치과위생사의 37.5%가 타 업무로 배치되어 공공 구강보건 인력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워크레인모꼬지
협동조합

공공 건설공사만이라도 건설노동자 임금, 장비 대금 직접 지급을 전면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27만 건설현장 노동자의 오랜 숙원인 공공공사의 임금, 장비 대금 직접 지불제가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지 정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누적 2조 원에 육박하는 임금, 장비 대금 체불을 방치한 상태에서는 새로운 사회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도 낸 바 있는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이 해소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직접고용 미이행입니다. 또한 압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발주처가 노무비를 구분 지급하도록 여러 규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건설사 계좌를 거치는 구조에서는 제도와 현실이 따로 놀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고도 임금을 못 받고,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중간착취 4법을 고치겠다며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을 손보겠다고 나섰지만, 이것으로는 건설현장의 반복되는 임금 체불을 근절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 소관의 근로기준법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이 아닌, 국토부와 기재부의 건설 계약·고용 관련 법규·실태를 제대로 개선해야만 임금 체불 근절이 가능합니다.

철도공단의 경우 애초에 발주자인 공단이 별도의 특수 계좌를 개설하여 임금을 해당 계좌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야 부도 등이 일어나도 발주처에서 지급한 임금이 압류되지 않고 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전자 조달 시스템에서 임금·장비·자재·하도급 대금 등을 건설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전면 개·보수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는 민주당이 약속한 건설현장의 중간착취 근절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철도공단 및 일부 지자체의 특수 계좌를 통한 발주처 직접 지급 제도 시행으로 인해 각종 지급 보증보험 가입 등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만약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답을 민주당이 내놓아야 수십 년 지속된 건설현장 노동자 임금, 장비 대금 체불 근절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의 활동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기존의 정책이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이유와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부처의 제도들을 세세하게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청취해야 할 것입니다

(사)한국음악협회

K-컬처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처우와 재정적 지원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23년 국회가 편성했던 정부 예산안 638조 7000억 원 중 문화예술·체육·관광 관련 예산은 6조 7408억 원으로 1.35%를 차지했으나, 2024년에는 656조 9000억 원 중 6조 9796억 원으로 1.06%를 차지하였습니다. 지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K-컬처의 위상과는 달리 정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2023년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 재정 2% 시대를 여는 비전 대회'를 위시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위상을 위한 국가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아직 예술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처우 개선·복지 증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 예술인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예술은 우리 삶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본질적 가치이며,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문화 1위,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정부 예산 2% 편성을 이룩하여 예술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높이고, 그들이 점차 자립도를 키워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제화를 진행해야 한다고고 생각합니다

(사)한국공예예술가협회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금전, 부동산 등 재화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을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에 맞추되 수준 높은 이상, 철학 사상에 가까이 접근하고 이를 각 가정, 학교 등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지고 위계질서가 흐트러짐에 따라 부모 자식 사이에도 온갖 끔찍한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가 변질되고 단절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즉 교육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전통 무예, 무속, 공예, 국악, 놀이 문화 등의 분야별 대표자들을 선별하여 위원회를 만들고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진행해 이를 보완하면서 서서히 전통문화를 되살려 나가야 합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먼저 신뢰가 보편화되어야 하며 서로 존경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수입니다. 가정, 유아원, 학교의 기본적 교육에서부터 근면 성실, 정의, 정정당당, 미래 탐구를 통하여 이상과 철학이 확실한 미래를 향해 정진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주입시켜야 합니다.

등대복지회

단절된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복원시키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야 할까요?

최근 몇 년간 남북 간에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대화는 물론 민간단체를 통한 순수한 인도적인 지원과 교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의 복원은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반도 내 장기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세계 평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간 대화 채널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단체들의 대북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국내외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안정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후손들의 삶과도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므로, 무엇보다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를 인지시키고 평화적인 남북대화와 협상,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은 물론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변화의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지독한 편견과 차별, 학대와 인권침해에서 해방되어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등록 정신장애인 10만여 명, 중증 정신질환자 70만여 명(추정)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과 학대에 시달리며 인권 보호의의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빙자한 격리 강박에 죽어 나가고, 법적인 자격 제한과 사회적 편견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60~70%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이어 갑니다. 널리 알려진 범죄자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순식간에 대중의 욕받이로 전락하고야 마는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삶이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인권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열악하고 위험 산업현장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도 아프면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는 2023년 기준 약 100만 명으로, 제조업·농축산업·건설업 등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5%가 이주노동자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은행은 이주노동자가 한국 GDP의 약 1.9%를 직접 창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건강권 측면에서 심각한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우리나라 노동자보다 약 1.5배 높으나, 미등록 체류자(약 40만 명 추산)는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중 36.7%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주된 이유로 '의료비 부담'과 '체류 자격 문제'를 꼽았습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의료보장 확대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 통합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노동자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들이 접근 가능한 의료서비스에 응급의료뿐 아니라 필수 예방의료까지 포함하여 이주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들이 건강한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헌법에 명시된 독립 정신을 어떻게 구체화할까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을 공무원, 군인,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커리큘럼에 정규적으로 삽입하는 방안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사관학교 교수진에 독립운동사 교수를 임용하고,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를 정례화하며,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운동 기념 단체와 사관학교 간의 자매결연을 제안합니다. 또한 〈독립군가〉를 국군장병에게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사)청소년건강·
활동진흥재단

청소년도 유권자입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5번 이상 옮겨진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이제 청소년 정책의 뿌리가 필요합니다.

학술적인 데이터를 신뢰하시나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학자들 때문에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현장에 한 번도 나가 보지 않고, 오로지 책상과 강단에서 뉴스와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론적 근거에 의한 정보만을 가지고 진단·평가했기 때문에 지금의 망가진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40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학자들에게 답을 구해 보면 아주 근사한 정책적 용어로 답을 할 것입니다. 40~50대 여러분은 그들이 내놓은 답을 신뢰하고 그들의 의견에 공감하시나요?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잘하면 잘 살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배웠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사회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았고,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답해 주지 않았기에 40대 전후의 사람들이 직장 위기, 경제 위기, 가정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학자들의 이론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낮은 곳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지지와 국민들의 지지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위생물수건
처리업중앙회

‘식품 접객 업소용 물티슈’는 환경오염 물질이며,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위생용품관리법으로 관리되는 식품 접객 업소용 물티슈는 환경오염 물질이며 일회용품입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이를 일회용품으로 규정하고 그 사용을 금지한다고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예기간 3년을 두고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어서 환경분담금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관련 대응책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식품 접객 업소용 물티슈는 원료가 합성섬유여서 썩는 데 100년이 걸리고, 태우면 발암물질을 내뿜으며, 하루에도 쓰레기로 수백 톤이 배출됩니다. 그야말로 100%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일회용 식품 접객 업소용 물티슈를 규제 대상에 반드시 추가하여 그 사용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대체 품목으로 100% 천연펄프가 거론되는데, 이 또한 일회용품으로 지구온난회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사용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식품 접객 업소용 물티슈의 대체 품목으로는 기존에 사용해 오던 위생 물수건을 적극 권장하여야 합니다. 위생 물수건은 재사용이 가능하여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고 10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민간기업 플랫폼을 통해 안전관리가 도외시된 채 피부, 미용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본래 목적인 의료 사각지대 보완 역할을 수행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이후 시범 사업 형태로 전환되어 운영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비대면 진료 누적 건수는 1100만 건에 달했는데 대부분은 여드름,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22%), 탈모(12%), 인공눈물(4%) 관련 진료와 같은 비필수·비급여 진료였고, 지난 12월 비만 처방이 제한되기 전까지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 처방도 매우 많았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제도의 주요 목적을 잃고, 단지 특정 의약품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탓에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정부가 비대면 수가를 가산하여 비대면 진료 제공을 조장하고 진료 중개 플랫폼을 민간기업에 의존한 결과 비대면 진료를 공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의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비대면 진료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고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100여 개 국가가 사용하는 임신 중지 약물(대표 상품명: 미프진)은 왜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을까요?

2017년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여성들이 미프진 도입을 요구한 지 7년이 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지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이후 형법상 처벌 조항이 사라지고 임신 중지가 합법화되었지만, 여전히 임신중지 약물은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시민사회는 유산 유도제 도입을 요구하며 식약처에 집단 민원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형법상 임신 중지 허용 기간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며 허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문헌을 통해 허용 주수를 결정해야 하는 식약처가 헌법불합치결정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허가를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싼 비용과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을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안전한 임신 중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100개 국가에서 안전하게 사용되는 유산 유도제가 하루속히 도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두의 질문

일러두기

당신의 질문이 세상을 바꿀 때까지 〈모두의 질문Q〉는 국민들의 질문을 빠짐없이 담을 것입니다.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포함되었을 수 있으나, 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으려는 의도입니다.

www.q4all.kr에 접속하시면 질문과 더불어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빠짐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및 거버넌스
민주주의

최형진	국짐당은 국민의 짐. 내란옹호 정당인데, 언제 해산합니까?
강동호	불명예스러운 대통령 발행 훈포장 갱신
이원홍	법치국가의 가면, 권력자들의 파라다이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진정한 법치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김재식	진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문정욱	엘리트 계층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의 특권의식 이대로 괜찮을까요?
전일웅	불법 위헌 계엄과 내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자유민주적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할까요?
백승일	우리나라의 권력들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임혜리	언제까지 정치이야기가 불편해야 할까요
강범석	두번 다시는 이번과 같은 자기자신을 위한 내란 계엄이 안 일어 날 수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법안을 만듭시다
정미숙	대통령 권한 제한인 탄핵을 왜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을까?
김보영	대통령을 국민이 소환하는 제도는 왜 한국엔 없나요?
신민호	판사의 범죄를 판사가 재판하게 하는 게 맞나?
김영열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고 투표할 수 있다면, 세상은 달라질까?
서수향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 파면하기가 왜 이리 힘든가요?
김진익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윤근영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제한해야 하는가?
홍창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다양한 직군에서 해악이 발생할때, 국민들은 그 자격을 취소시킬 방법이 왜 없을까요?
정재화	권력 남용을 막고 공익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를 잘 만들고 만든 제도를 어떻게 잘 실행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숙	왜 제 주변인들은 정치에 무관심할까요?
서보윤	탄핵 국면인 만큼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서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요?
박재욱	모두의 의견이 하나하나 소중해 질수 없을까요?
최가라뫼	입법부는 행정부의 시행령이나 사법부의 판결문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제도가 있나요?
이성우	3권분립의 수장을 투표로 뽑으면 안되나요?
이중재	재난문자는 왜 잘 보내면서 중요 현안에 대한 전국민 설문조사는 못하나요?
김영호	대통령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권은 독재를 위한 간편한 수단이 아닌가요?
김갑중	김건희 씨의 계엄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하지 않나요?
임차우	선출되지 않은 막강 권력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 입니다.
이원구	국민에게 있어 개개인의 삶이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택한 헌법으로 만든 정치가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문수	아스팔트 집회 참여자들은 말도 되지 않는 거짓 선동을 왜 그대로 믿을까?
양창열	국민들이 소중히 빛나는 존재로 대접받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김경애	내란 피해자는 국민 모두 입니다. 증인으로 불러주세요.
차기수	대통령 선출은 직선제인데 탄핵은 왜 국회의원만이 가능한가요?
김치호	다수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소수를 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정호	일부의 국민들은 왜 투표를 기권하는 걸까요?
이승철	내란 수괴 부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평화로운 우리의 일상으로 어떻게 빨리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박상규	대한민국에 태어나 기본 교육만 받은 국민으로써 남는 건 반공과 먹고 사는 사고방식 과연 잘 살고 있는건가?
노청호	왜 대통령은 견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가?
김정민	왜 계엄이라는 제도는 아직도 존재하는 거죠?
이연배	질문하기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훈영	어르신들 중에 왕정을 내심 선호하는 분들이 왕정보다 민주공화정이 좋다는 점을 아실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병부	입법부나 행정부는 국민 투표로 일 할 일꾼 뽑습니다
김경숙	과거 직접민주제가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많은 부분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김경숙	권력을 대리 받을 때는 구걸하다시피하면서, 왜 잘못했을 때 주권자가 해고도 못 시킨단 말입니까?
심영철	우리 민주주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슬픈가요?
이영섭	면장 동장은 왜 주만들이 직접 선출하지 못하는걸까요?
김진석	우리는 아니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박정현	왜 시민 혁명은 실패를 거듭하고 오욕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가? 근원적 해결책은 무엇인가!
황중길	선출되지 않는 기관장과 권력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이유는?
김규식	탄핵 촉구 집회의 피켓 문구로는 '헌법 위반'이 더 명확한 표현이 아닐까요?
윤동환	대통령 경호. 경찰에서 하면 안되나요?
김준호	헌재 탄핵 인용 후 극우 세력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 우려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최대식	직접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특히 포퓰리즘 방지책은?
이승후	내란 관여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만이 반복적인 불행을 막는 방법이 아닐까요?
황인혁	내란에 대해서는 사형제를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원석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김영환	한국인은 정치에 왜 관찰하고 질문하지 않는가?
박용식	평화로운 상태에서 비상 계엄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 할 방법은 없나?
최형진	전두환이 자연사하도록 내버려 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윤석렬 사형집행 실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최기호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순으로 권력 승계가 되는 것이 맞나?
장병현	기관(조직)의 장에게 너무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묻기는 왜 이렇게 어렵지요?
서우경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법 같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이해관계 충돌 관련 더 강력하고도 효력 있는 법이 필요하지 않나요?
홍균표	주민이 선출한 동장이나 면장이 시장의 예산 편성 권한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 안 될까요?
진귀수	탄핵 열차를 탄 썩열이가 징역 역에 내릴 수 있도록 서두르지 맙시다.
이오남	윗자리에 올라가면 다들 왜 변질될까요?
김진석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에너지가 정치에 반영되는 방법은 국민 전자 투표제가 아닐까요?
권재진	우리 대한민국은 왜 질문이 없는 사회인가? (저는 10년전 우리 사회가 질문이 없는 사회라 생각되어 질문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바른질문연구소>를 운영중입니다.)

권재진	우리 사회는 왜(Why)라는 질문이 금기시되어 있나?
김예순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황인용	왜 행정부 공무원이 법을 만드나요? 민주정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나요?
김영호	국가반란 외환유치 내란수괴 윤석렬은 사형되면 전재산을 강제몰수하나요?
강만진	현재의 민주주의를 보조하고 감시하는 전자 직접민주주의 방법을 구현해볼수 없을까요?
성원준	국민의 권력이 일부 세력에게 찬탈되거나 오용되지 않고 오롯이 국민에게서 나오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김미순	비상 계엄령을 국회의원들의 휴대폰 인증 투표로 해제할 수는 없나요?
김연기	계엄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정원일	현재 탄핵 심판의 제도에 민의가 있는건가요?
김영호	국가반역 내란반란 독재 범죄자 박정희 전두환윤석렬의 전재산을 제대로 몰수해야 하지 않나요?
김영호	내란반란범 박정희가 키운 내란반란범 전두환이 키운 내란반란범 윤석렬은 예고된 내란반란이 아니였나요?
황성우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영호	내란반란범 윤석렬의 탄핵이 기각이 되면 국민저항권을 사용해도 되나요?
김영호	내란반란범 윤석렬의 탄핵이 인용이 되어서 폭동알바들이 헌재에서 폭동을 일으키면 국민저항권으로 폭동을 제압해도 되나요?
김영호	대한민국은 12.3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수괴 윤석렬 민간인 김건희의 내란반란 전후로 나뉠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조한진	일반 시민과 국민들의 의지를 정치와 정책에 바로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손승희	탄핵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왜 정치를 법원에 맡깁니까?
김부경	최상목과 내각 전체를 탄핵해야 합니다.
박규삼	(비상)계엄제도가 필요한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엄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것이 타당한가?
김동주	12.3 내란 사태 이후에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정욱	범죄자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해야 하나요?
김영호	대한민국 국민들이 극우 타령 그만하고 독재잔재 부역자라고 똑바로 말할 수 없나요?
김영호	검찰총장은 국가반란 외환유치 내란수괴 윤석렬의 위법계엄명령 검찰임무 공문을 안 받았을까요?
김영호	12.3 국가반란 외환유치 내란반란일날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장에게 보낸 위법계엄 공문을 전체조사를 해야하지 않나요?
이재준	대통령 궐위 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자가 대행을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김영호	대통령의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 범죄로 탄핵 시 권한 대행을 국민투표로 선출된 부통령으로 하면 안 될까요?
김영호	국가반란 외환유치 내란수괴 윤석렬이 임명한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닌가요?
이승훈	대의민주정은 민주정에 반하는 것 아닌가!
김영호	왜 이준석 같은 사당화를 시도하는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국민투표법을 안 만드나요?
김영호	대왕고래 사기에 대한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수괴 윤석렬, 민간인 김건희에 대한 전액 손해배상법을 왜 안 만드나요?
김영호	왜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수괴 윤석렬, 민간인 김건희의 내란반란에 대한 공무원 및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항명구제법을 안 만드나요?
김영호	대한민국에는 극우가 아니라 독재의 잔재 부역자만 있을 뿐인데, 왜 극우라는 모호한 단어를 쓰나요?
임선희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뽑는데, 잘못한 대통령을 탄핵할 때 국민투표하는 건 어떨까요?
김영호	왜 위헌정당해산 국민투표법을 안 만들고 있나요?
김영호	왜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범 이승만,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윤석렬, 민간인 김건희에 대한 명예훼손권을 영구박탈하는 법을 안 만드나요?
김영호	왜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 국민투표법을 당장 안 만들고 있나요?
김부경	왜 내란에 연루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을 탄핵하지 못하는가?
이숙번	민의를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무엇인가요?
정준모	국가 공무원 탄핵 후 헌재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선출 권력이 탄핵한 것을 왜 임명 공무원에게 재판받아야 하나요?
정세나	우리가 뽑은 선출직들은 왜 당의 의견을 추구할까요? 우리의 의견은 어디로 갔나요?
김영호	왜 국민이라는 말을 서민이라는 말로 자꾸 사용하나요? 서민이라는 말을 법으로 금지 퇴출시켜야 하지 않나요?
이혜란	내란대행 최상목 언제 탄핵되나요?
김지현	극우 파시즘적인 제2 윤석열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황인용	군대로 억압하는 독재전제정치(=공산주의정치)를 지지하는가? 아니면, 민주정치를 지지하는가? 라는 여론조사는 없나요???
정성영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삼권 분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노은석	군인들이 더 이상 정치 폭력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영호	왜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수괴 윤석렬이 임명한 최상목을 탄핵시키지 않나요?
김영호	왜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수괴 윤석렬 민간인 김건희 관련 친족의 계좌를 동결하지 않나요?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렬은 월급을 받고 있나요?
김영호	왜 국가반란 외환유치 내란수괴 윤석렬의 아내 민간인 김건희가 경호를 받고 있나요?
김정민	계엄이라는 선택지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닐까요?
이정삼	직접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들은?
최수연	대통령의 권력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이지훈	이재명 대표님의 호소를 듣고 국회로 간 국민들에게 감사패를 주세요.
임지혜	최상목 대통령 대행을 왜 탄핵하지 않는건가요?
김영호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수괴 독재시도범 윤석렬 민간인 김건희의 2차 내란반란이 있으면 국민저항권으로 사형집행을 해도 되나요?
김학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민회의사당'으로 이름을 바꾸자!
김영호	왜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수괴 윤석렬, 민간인 김건희 내란반란에 항명사표 공무원들에 대한 독재시도항명구제법을 안 만드나요?
김영호	왜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수괴 윤석렬, 민간인 김건희의 내란반란에 대한 사형집행 국민투표법을 안 만드나요?
김영호	왜 대통령의 과도한 법적 권한을 내란반란을 못 할 정도로 최소화시키는 법을 안 만드나요?
김영호	왜 국가반란 외환유치 내란반란시도 대통령의 셀프 불법계엄해제절차를 아직도 폐지하지 않나요?
JOHN J KIM	왜 유리는 이재명 대표의 연설의 성장 정책등에 관하여 재외국민도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홍진우	경제적, 심리적 불공정, 불평등 해결 없이는 민주주의는 매 시간이 위기입니다.
남기원	비상 계엄에 투입된 특전사들이 AI 군인이 였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였을까?
강대삼	현재의 내란 사태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김신희	내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민 의견을 반영할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한은영	계엄을 한 행정부가 왜 계속 유지 되어야 하나요?
문덕식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장애가 있고 소득이 적더라도 평등한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진호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석남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정민	내란의 주동자와 공범들에게 사형(또는 무기징역)뿐만 아니라 재산 몰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준철	미복귀 hid가 아직 존재하는건가요?
송봉호	이번 내란처럼 정부각료 및 국힘당처럼 내란동조세력에 의해 국회의 의결이 제한받을 경우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참여 의결기능을 만들면 어떨지요
한경석	내란범 처리가 너무 지지부진해지면 나라가 심각한 내분을 겪을 수 있지 않나요?
김영호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수괴 윤석렬 민간인 김건희가 헌재의 파면에 2차독재시도를 하면 국민저항권으로 사형집행을 해도 되나요?
윤연정	정치는 곧 삶이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당당히 내어야 하지 않나요?
김정민	내란 동조자가 내란을 심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문창환	12.3 내란을 '친위쿠데타'로 공식 명명할 수는 없나요?
박문수	12.3 계엄 당시 국회 앞으로 달려가신 분들,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세요.
정재일	경제민주화, 주주총회 시 소액주주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김영호	이재명 선출직 공무원님은 대통령이 되면 독재부역자들을 뿌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김정민	내란이 발생했을 때, 내란범은 물론 내란당과 내란 동조자들을 즉시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유성오	계엄은 꼭 필요한 시스템인가?
강태곤	정치를 얘기하고 토론 하는 것을 왜 두려워 할까요?
김영호	독재시도범 윤석렬의 부역자 민간인 노상원의 몽둥이위협에 무섭다는 나약함으로 대한민국의 독재잔재부역자를 뿌리뽑을 수 있겠습니까?
정철	대통령 업무와 관련 없는 기관장은 국민이 직접 뽑았으면 합니다.
석태원	정치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들에 대하여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김태훈	정치와 주권자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종석	최상목 포함 내란을 미리 알았던 국무회의 참석자들 등 아직도 처벌을 못받는 건 둘째치고 지위를 유지하며 오히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직권을 남용하는 사태를 국민들은 언제까지 봐야 하나요.
조규봉	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바로 수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직접 민주주의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에 대해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요?
전명숙	비상계엄으로 인한 엄청난 손실에 대한 청구는 몇대에 걸쳐서라도 갚게 하고 내란수괴는 어떤 정권이 와도 사면금지 되게 해 주세요!
HellPer	검찰과 판사는 누가 심판하는가, 그리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공약을 안 지키면 왜 처벌이 없는 것인가?
Ajoovv	어떻게 하면 모든 선거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까?
서정민-h7t	50년 뒤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사건(12.3 계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김유숙	기획재정부는 왜 국민의 대의를 실행하는 행정부의 일원으로 보이지 않고 단독적인 이익집단처럼 행동할까요?
김정민	어떤 미친자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독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정민	독재를 시도한 정권에 대한 철저한 처벌은 보복정치가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 아닌가요?
김희선	내란은 언제 끝납니까
양명석	우리나라 삼권분립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삼권에 해당하는 자들은 서로의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기무	정치인끼리의 고발 사법정치가 국민들에게 까지 옮겨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조인하	언제쯤 이번 내란과 관련된 검찰대통령실경호처등 부처의 관련자들과 친일파는 합당한 처벌을 받을까요?
김정민	독재 시도는 누구든지 극형에 처한다는 공식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남궁호	모든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대학 총장 등)에 대해 내부 기관 및 국민이 탄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박용식	김건희 출국금지 시키고 반드시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유우종	공공재와 사적 재산을 어떻게 구분하고, 개인의 공적 결정에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안태환	왜 한국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40%의 탄핵 반대가 나올까요?
윤진득	설문조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신박한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요?
동원영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시국에 대한 보수 기독교계의 반응과 방어 대책은 무엇입니까?
유현석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주인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김성수	계엄령은 왜 필요한가?
권재형	518 광주혁명에 이어 123비상계엄까지 공권력을 동원한 반민주 반헌법적 무력행위가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어떠한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계획인가요?
조윤정	삼권분립 안정망을 좀 더 촘촘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홍대식	독립기념관, 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이 되려면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 않나요?
이명학	헌재는 경고 정도의 의미로 한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왜 질의하지 않나요?
박상종	12.3 내란 사태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하준서	12.3 내란 혐의자들 대신 유능한 공직자들이 행정을 맡으면 되지 않습니까?
김정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데스노트라니..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에서 살 방법은 없는 걸까?
김희준	대통령실의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가요?
도용호	농촌 이장님들은 왜? 대통령 보다 더 높은 갑질울/권력을 행사 할까요?
박태순	투표권 18세이상은 적정한가?
하준서	다수결의 원칙이 가장 명확한 민주주의 원칙 아닙니까?
김학귀	질문을 하지 못하는 국민은 행복해질 의무가 없다. 질문을 받지 않는 나라는 계엄이 반복된다.
신범진	대통령이 내란으로 업무 중지가 되었는데 왜 그 졸개들에게 대행을 맡겨야 되나요?
박준엽	주민자치회의 올바른 발전 방향은?
임유한	개헌! 개헌! 하는데 정치인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을 할 수 없는지요?
조규봉	고위직 공무원의 사면은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게끔 법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김행남	비상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되나요?
김미정	계엄을 겪어 보니 대통령, 국회의원, 사법부 수뇌부를 견제하는 수단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헌종	숙의형 시민의회를 도입하자 국회가 자신들의 세비와 수당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의원들의 이해관계의 핵심인 선거구 결정 등을 숙의형 시민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어떤가요?
조준식	비상계엄을 군 미필자도 선포할수있나요
조인하	헌재 국회측 최후 변론시 계엄 당일 국회 앞에서 저항한 시민분 들의 사연을 최후변론 내용에 포함하면 안될까요
박창영	계엄의 원인을 파악하고 연관자를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최준영	어떻게 해야 정책제안을 할수 있을까요?
양미순	윤석열의 계엄으로 인한 내란성 우울증을 윤석열에게 손해배상청구로 받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경진	일제 파시즘, 군부 독재에 대한 강행 규범을 두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원홍	쿠데타 직접세력 및 간접 동조세력에 대한 처벌을 재산권 몰수 및 재산권 박탈을 하는게 현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가장 합당 처벌이 아닐까?

윤진득	매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활성화하면 어떨까요?
도완영	독재는 싫다고 하면서 왜 국회는 소수에게 권력을 허용해 주고 있나요?
김민정	녹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윤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박인홍	탄핵 절차를 바꿀 수 없을까요?
전장규	탄핵 인용 시 불복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박정현	대의 민주제 이대로 좋은가? 직접 민주제 개헌을 통한 시민 혁명 완수의 길
김두봉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적 의사결정단계에 국민적 판단 결정 의사를 반영하는 정부의 국민의사반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요 ?
차성훈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주의 회복과 카르텔 척결에 대한 질문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 맞습니까?
최계영	거주지와 통학로에는 집회 신고를 낼 수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철견	개헌을 전국선거 때마다 하나 내지 두개 항목 정도 원포인트로 하면 안될까요?
김승아	이번에 내란 수괴의 탄핵을 겪으며..
윤제필	다음에 보수에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과연 성공적인 계엄을 시도하지 않을거란 보장이 있을까요?
김학귀	담벼락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다 – 12.3 '국민저항의 날' 제정 제안
하준서	내란범이 활보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경준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왜 나오게만 하나요?
김재혁	한미연합사령부가 내란음모사건을 관할한다면 내정간섭일까 아니면 합법일까
김재혁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박찬식	학생들의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 방안은 없나요?
김용준	윤석열 파면을 국민투표로 하면 안되나요?
박창영	허망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 가다니..
이수영	어떻게 다양한 국민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회 참여의 폭을 넓히고, 포괄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용기	윤석열 내란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를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김선동	헌재 재판관 중 한 분 이상이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탄핵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주갑돈	내란범 구속을 신속하게 할 별도 법은 왜 없나요?
이영진	청소년이 마음껏 정치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합니다.
신진훈	이번 대통령 내란범죄에 대해 유무죄 여부 왜 헌재에서 판단 해야하니?
최준원	비상 계엄 및 경비 계엄은 국회에 보고한 이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차성훈	대통령 및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 위원들에 대한 탄핵이 왜 이리 더디기만 한가요? 필요하다면 제2의 탄핵안도 모색할 때이지 않을까요?
한그린	지금은 한 걸음씩 빨라야 할 때가 아닐까요?
김기창	내란극복을 위한 대국민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강영은	왜 정의로운 우리는 항상 악한 자들에게 당하고만 있나요?
도완영	전관예우나 쩜짜미나 카르텔을 막으려면 검판사, 세무, 재정을 비롯해 각 분야 공직자들의 전문 분야의 개업및 취업을 3년 정도 금지해야 하지 않나요?
박래권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용상	얼룩말의 똥꼬를 물어뜯어 내장을 꺼내먹는 하이에나에게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김지현	암담한 미래, 살아갈 희망을 체제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정해원	더불어 산다는 것, 당신은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김회근	탄핵 중인 공직자들에게 왜 국민 세금으로 매월 월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우수경	현재 법질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형식만 남은 것 아닌가요?
김상희	대통령 파면시 극우세력의 폭동 가능성은 얼마일까? 경찰의 적극 대처 의지는 얼마나 될까?
김진태	헌재 재판관 및 가족들 위협받아 늦어지는 건 아닐까요?
최준원	하루빨리 헌재의 파면 결정이나와 이 혼란을 정리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준비된 경제.민생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유진희	탄핵 각하에 대해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상기	네어버 알고리즘(정치 고관여층 관리 의심, 내란정권 민감 단어 조작) 포털 감시 알고리즘 모니터를 강화해 주세요. 언론 모니터링 강화해 주세요.
박진희	최상목 탄핵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이화향	탄핵당하거나 직무 정지된 사람들의 임금은 그 기간동안 정지되어야
김형일	그냥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만 있는건가요?
설원경	권력자 특권 폐지해야합니다. 대통령, 입법, 사법, 행정, 재벌 총수에 국민소환제, 주주소환제 이뤄내야 합니다.
박용식	탄핵은 헌재에서 하지말고, 국민투표로 결정 할 수 없을까?
고부경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바꾸면 안되나요?
주갑돈	대통령 탄핵을 국민투표로 할 수 없나?
문고훈	친위 쿠데타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합니다.
전우진	국민주권 시대의 개막 -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와 국민 참여 투표 등 민주적 제도와 민주적 절차를 실행하는데 있어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어준다면 정말 좋을 듯 합니다.
고정진	3월20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탄핵부터 처리는 결국 국힘당 압박에 굴복한것 아닌지?
김옥식	내란으로 확실해진 엘리트 집단의 극악한 이기주의 이번 기회에 바꾸지 않는다면 더이상 나라의 발전은 없을것 같습니다.
조용미	집회에서 나오는 시민발언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그린	혹시 군인 자주 목격하는 분들 계신가요? 2차 계엄 준비하는 것 아닐까요?
유진희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 헌법 개정 제안합니다.
안호진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 지연에 관한 민주당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승철	집단 지성이 모여 대한민국의 권력 카르텔 지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오연주	대통령 탄핵과 같은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합니다.
임한영	탄핵심판 기각에 대비해서 계엄법을 수정해 둬야 하지 않을까요?
장규홍	국방부 나라장터에 2025년 3월 12일 영현백 3,116개가 긴급공고 되었는데...
임한영	윤 탄핵 기각에 대비해서 계엄법 수정을 건의 합니다.
권희영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이성우	대통령 탄핵 결정은 헌재가 아닌 전국민 투표로 가능했으면....
엄태남	권력의 집중화로 인한 문제점 개선 방안은?
박정현	헌법 재판소에 의한 대통령 탄핵 제도 개정해야 겠지요?!
김민정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질서 구축에 필요한 견제방법과 그것을 어떻게 작동시켜야 할까요?
김유애	관료독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태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장찬영	한덕수 총리 기각 우려한 사람 나 혼자입니까?
임경민	12.3계엄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그날 개인개인의 사연을 담은 사연집을 만드는것은 어떻습니까
박규삼	민주시민을 국정 전반 곳곳에 스며들게 하여, 반인권적 행위는 할 수 없게 할 수 없는가?
하태환	전문가와 엘리트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우양수	제2의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내란세력들을 응징할 수 없나요?
지태호	현실과 법이 안맞아요. 누가 다 하나요 국민의참여를 높여야 하지않을까요
박문수	대통령은 국민은 투표로 선출합니다. 대통령탄핵은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헌재가 웬말입니까?
성수아	우리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의 집단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채현희	헌재 탄핵 선고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요?
김진태	헌재 재판소 무시하고, 국민투표로 탄핵 여부 결정 합시다. 찬성하면 추천!
박정현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민이 결정해야.
고정진	대통령이 선출한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제척사항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그린	국민투표 원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해야한다고 봅니다.
윤재수	대통령 탄핵권리를 국민에게로.
김진태	군 관 이상 두번다시 불법적 계엄으로 피해보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군관 이상 윤 탄핵 찬성 기자회견을 해야 힘이 된다.
김영석	그만 탄핵 좀 하세요!
박규삼	All탄핵: 권력분립은 국민주권에 자리를 양보하여, 국회는 정부를 흡수통합하여, 조속히 내란을 진압하여, 내전을 막아라.
김선흥	고담준론 비분강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거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책임정치

김지현	국회의원은 왜 평생 합니까 ? 정치인들도 정년을 만듭시다
이경종	대통령 및 고위직 평가 시스템(정기, 수시)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박용진	왜 국회의원은 탄핵이나 국민소환제가 없나요?
김영호	왜 아직도 대한민국은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을 저지른 국회의원, 대통령에 대한 파면 국민투표법을 못 만든 것인가?
윤현중	선출직 공무원 급여는 누가 주는가?
최호천	국민의 뜻에 반하여 일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검사 등 모든 공직자를 국민이 요구하여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최영희	대통령 검찰총장등.. 고위 공직 수장들을 국민이 탄핵하면 안되나요?
곽동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부진 시 월급 삭감 제도를 신설하면 어떨까요?
김영호	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독재의 잔재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경력직공무원만 지키는 것을 폐지하지 못한 것일까요?
김영호	왜 국회의원은 연임제한법을 만들지 않을까요?
차기수	근로자는 정년이 있는데 정치인은 정년이 없는게 평등한가요?
한호섭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월급은 왜 주나요?
김형민	김건희는 이대로 놔두실겁니까?
김태수	국회의원분들이 월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수는 없나요?
이은주	선출직의 해임에 왜 국민투표로 해임하는 절차는 없는가?
이현정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때 과연 세비를 받아도 되는 걸까요?
이승용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의약분업은 적용 되고 있는가?
김도연	국회의원 연금을 줘야하나요?
김정두	국회의원 “뱃지”는 없앱시다.
채영기	인원이 많은 선거구의 주민들은 대표성에서 차별을 받게 되지 않나요?
김영호	왜 선출직 공무원들은 추사억인 용어인 정치라는 단어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말 대신에 서민이라는 말을 사용하나요?
장수원	뽑은 사람이 해고도 할 수 있듯이 대통령 위법당 선출된 공무원들도 나라에 불이익을 가져올시 국민이 직위발탁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김은한	고위공직자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는?
이성순	지나친 법률가 위주의 국회의원에 다양한 직군이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남궁정	어디까지 뽑아봤니?_선출직을 늘립시다!
윤성필	당 대표, 국회의원들은 왜 법의 질서를 무시 할 수 있는가
김동재	최소한의 기본 인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도록 할수는 없나요?
탁수신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배치되면 현장 일일체험을 반드시 했으면 합니다.
노청호	왜 검사 판사 대통령은 국민위에 군림하는가?
김영호	왜 국회의원은 하루만 일해도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 연금을 받나요?
김영호	왜 국회의원은 월급을 많이 받나요? 월급 300만원이 적절한 금액이 아닐까요?
박재형	선출직(국회의원, 시장,도지사,군수 등)들은 왜? 선거때만 국민들께 고개숙이고 선거가 끝나면 뻣뻣해지는가?
김영호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수괴 윤석렬을 박근혜처럼 사면해주는 거 아닌지 의심해도 되나요?
김정학	국회의원 자격 검사는 왜 안하나요?
김영호	왜 대통령, 국회의원은 마치 정당 소속만 출마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가요?
김정학	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도 당적을 유지하나요?
김정민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대통령, 국회의원을 국민이 바로 처단할 수는 없나요?
김경숙	국가권력을 행사하던 공무원이 일반인이 되어서도 전용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윤진득	국회의원의 20억 원의 공천댓가 수수설에 대해서 묻습니다.
박병근	선출직의 임금의 동결과 인하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강현정	임명직은 청문회만 버티면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다 되는건가요?
유병례	국회의원은 왜 월급을 많이 받는가?
박성진	국회의원은 각 군마다 한명씩 둘 수는 없나요? 많이 뽑고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봉사직 국회의원
유병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 가능할까요?
고정진	이슈나 특정 주제가 생기면 정치 이야기 하면서 국회의원 정원를 줄이자 하는데 오히려 줄이자는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오히려 줄이면 정치가 악화 될겁니다.
CHRIS LEE	어째서 법조인이나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어의 오염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가?
홍균표	의회 의원이 너무 많아요.
임용빈	국회의원들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존재들인가?
정의철	국회의원도 3선에 제한을 둡시다.

김영호	왜 국회의원, 대통령은 월급을 많이 받죠? 국회의원 300만원, 대통령 500만원이 적당하지 않나요?
박시원	청문회 말고 정치인의 인성과 최소 소양을 검증하는 시험은 왜 못 만들죠?
백은광	권력기관이나 고위직공직 종사자의 국회의원 출마 조건 자격을 엄격하게 할수는 없나요?
한명우	누가 200조를 줄테니 오직 공익과 국익을 위하여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구원해보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동진	국회의원 선거 시, 우선적으로 출마자가 무임금 또는 최소한의 연봉 제시 및 보좌관 등 지원 인원을 최소화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게 하여, 국민이 봉사자의 마음을 갖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
배용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국가에 기친 손해가 금액으로 얼마나 될까요?
김흥태	왜 우리나라는 윤석열 같은 반짝 스타를 검증도 없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 당선시키는 과오를 반복하는가?
정성묵	정부출연 장의 임명은 누가해야 하는걸까?
김선희	왜? 위정자들이 싸놓은 똥을 민주시민이 항상 앞장서서 치워야하는가?
김영호	국가반란 외환유치 내란반란 범죄자들과 부역자들에게 왜 선거 투표권을 주나요?
김선재	대통령의 사면권은 이대로 좋은가요?
박도현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의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전성희	국회의원들의 비상식적인 막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요?
전성희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제처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면 안 될까요?
김지현	불성실한 국회의원(회의 불참 투표거부 등) 은 어떻게 퇴출시킬수 있나요? 국회의원의 근무규정이 필요합니다.
박은영	국회의원을 왜 봉사직으로 못할까?
차기수	대통령, 국회의원 출마 시 인성이나 정신의 건강 여부를 알 수 없을까요?
김영호	왜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돈이 없으면 못 나가죠? 쓸데없는 돈 들어가는 것을 없앨 수는 없나요?
박석란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안성제	국회의원 평가제도! 제대로된 국회의원 평가 쉽게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
김영호	내란반란범 전두환의 가족들은 왜 투표권을 박탈시키고 국외로 강제추방을 안 시키나요?
김영호	국가반란 외환유치 내란수괴 윤석렬의 파면이 기각되면 국민저항권을 사용해도 되나요?
이현철	왜 국회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정한 건가요?
김지현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박규삼	대통령도 탄핵시키는데, 도대체 국회의원은 용가리 통뼈인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정말 해 볼 생각이 있는가?
김현정	나는 왜 국회의원 투표권을 박탈당했는가?
정명희	국회의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투표 불참, 투표 보이콧에 대해 왜 불이익을 주지 않나요?
정명래	모든 국회의원은 단돈 1원이라도 받지 못하도록 해야 국정이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김영호	일 안하는 국회의원은 바로 파면하는 국만투표법을 왜 안 만드나요?
김산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의 탄핵 심판은 국민투표로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나요?
이상곤	국민에게 상처 주는 정치인을 영원히 퇴출시킬 방법은 없는 것인가?
구태원	정치인들은 왜 선거가 끝나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요? 적어도 서로 공통으로 공약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김영호	왜 국회의원 월급을 300만원으로 삭감하는 법을 당장 안 만드나요?
김영호	왜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노태우윤석렬민간인 김건희의 기본권을 보호해줘야 하나요?
유지원	학교 정부 군인 고위급 공무원들은 왜 책임감없고 무능한가? 승진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가?
오정아	장관을 선출직으로 결정하면 안 되나요?
우성제	각 부처의 장관은 해당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가 맡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김영호	왜 선출직 공무원만 정당가입의 자유권을 주나요? 행정직 공무원들도 정당가입의 자유를 주어야 독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김지현	협치타령 말고 제대로 정치인들의 위법함을 처벌 못하나요?
이기필	수준 떨어지는 국회의원들 삼진아웃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왜 당장 대통령 월급을 500만원으로 삭감하는 법을 안 만드나요? 500도 많은것 아닌가요?
이윤영	국회의원 배지는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서, 사원증 형식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한명우	윤석열이 날려먹은 236.7조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JOHN J KIM	선출 공무원에 관한 법 궐위시 (탄핵시)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김영호	왜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범 전두환,노태우때 부역한 검사들의 변호사면허를 영구박탈하고 공무원임용 금지법을 당장 안 만드나요?
김영호	왜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범죄 부역자들의 공무원임용금지법을 당장 안 만드나요?
김영호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 부역자들의 공무원임용금지법을 안 만들면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만들어도 되나요?
김영호	왜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 독재범죄자들의 대한민국 국적 영구박탈법을 당장 안 만드나요?
서나리	국회의원 연봉 인상, 왜 계속 승인합니까?
박정식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감시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죠? 그러니 시급히 필요합니다!
모사례	지도층의 사회윤리, 도덕을 검증 할 수 없을까요?
홍창효	성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사람이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게 정상일까요?
진평규	고위직 공무원은 왜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없나요?
이진호	대통령이 탄핵된 뒤 행정부의 서열 2위가 권한 대행이 되면 탄핵의 의미가 많이 흐려지지 않나요?
강동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데 개선할 방법은?
손찬희	왜 국회의원이 이상은 면책특권을 가져야 하는가?
김영호	왜 국회의원, 대통령의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떨어지나요?
정성진	김문수 같은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장관 등 고위 공무원에 임명되지 못하게 할 수 없을까요?
김영호	왜 당장 국회의원의 정당활동겸직금지법을 안 만드나요? 정당활동은 민간인당원들이 해야 옳은 것 아닌가요?
김영호	왜 당장 대통령포함 고위공직자의 독재시도에 대한 항명사표구제법을 안만드나요? 이법 안만들면 대한민국이 우스워지는거 아시죠?
김영호	왜 당장 국회의원,대통령 일괄 월급300만원으로 삭감하는 법안을 안 만드나요?
김영호	왜 독재시도 내란반란범을 지지하는 유튜버에게 국가세금으로 후원하는 국회의원을 탄핵하지 않나요?
홍지영	왜 대한민국에서는 뇌물많이 먹은 정치인은 자살 안하고 무병장수해요?
이동회	비선출직 지명직 임명직 공무원 정년제한 시행합시다.
백영민	왜 정치인은 실패한 자신의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나요?
이효진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 폐지는 가능할까요?
younglee-yt5hr	왜 공무원 인사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나요?
김내균	저질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을 클로즈업해서 국민들에게 매주 보여 주면 어떨까요?
김유철	국회의원의 출석부를 알 수 없나요?

이윤표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김성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자행되는 국회의원들의 헛소리를 국민들은 언제까지 들어야만 합니까?
강재용	어떻게 해야 C급 및 D급 고위공무원 선출을 방지 할 수 있는가?
박문구	국회의원들의 자기 공적인 알림을 위한 현수막 난발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shinhyunmin6937	국회의원 소환제 한다고 맨날 말로만 떠들고 언제하나요?
황정은	왜 국회의원들은 초딩들도 아는 대답을 명확히 하지 않나요?
윤찬삼	당을 보고 국회의원을 뽑는데 왜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고 지역구 의원을 뽑을까요?
안태용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 절차에 정신 감정을 추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동혁	왜 우리는 두 번이나 파렴치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상황을 만들었나요? 국회의원, 대통령, 지자체장 등의 선출직 리더들을 뽑고 나서 후회하는
	상황이 반복되는걸까요? 이 걸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요?
구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순위를 매기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안나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서민 코스프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과연 효과적인 전략일까요?
이진구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은 매우 잘하는데, 당직자들은 왜 대충 대충인가요? 공무원인가요? 정권교체를 위해 당직자를 교체할 수 없나요?
김주연	국회의원 수는 도대체 언제까지 300명일 작정인가요???
윤연정	정치를 혐오하도록 조장한 것은 누구입니까?
조용미	국회의원 선거의 룰을 왜 제3자가 정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정할까요?
임동민	듣기 좋은 공약을 내놓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안 지키면 어떤 불이익을 주나요?
박시현	정치인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김병헌	국회의원 아들을 군대 안 보내는 국회의원은 제명이나 사퇴시켜 주세요.
이동회	다주택자 고위 공직 임명을 금지시켜 주세요.
장수경	의원마다 매년 의정보고서 업로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까요?
정창규	대통령,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인사 시 공직자 적합도 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덕신	대통령 탄핵을 꼭 헌법재판소에 맡겨야 합니까? 계엄은 필요한것입니까?
윤성희	왜 정부관료들은 유럽으로 유학을 많이 않가나요?
송세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중간평가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동회	정치인 잘못에 대한 대국민 손해배상 청구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송세나	고위공직자의 중임을 금지해야 합니다.
김상길	국회의원 급여를 왜 국회의원이 결정하나요?
김다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없을까?
김민주	안귀령 후보 지역구 지역명도 모르는데 또 나올 생각 있으신가요?
공진세	고위공직자 관련회의는 회의록을 법적으로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폐기 금지해야 합니다.
임강빈	다수 (예비)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이들이 의회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도완영	국회 의원 숫자 인구와 사회 변화에 맞게 늘이면 안되나요?
김욱진	우리지역구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자랑스러운가?
정종태	국방부 장관을 꼭 장성 출신들이 해야 하나요?
최영	이명박이 잘한일 못한일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세요
김홍철	고위 공직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판검사 퇴직 후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장길	국회의원 특권 포기법은 언제쯤 만들어지나요?
김다솔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각료를 겸직해도 될까요?
김진수	국회의원은 자격 면허증이 없나요?
박세용	지방의회 의원 정당 공천제의 폐해는 왜 공론화되지 않나요?
임현재	왜 국회의원, 대통령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변효임	최상목을 탄핵 못 하는 이유가 뭔가요?
구준근	김남희 의원님, 이재명 대표님 변호하려고 국회의원이 되신 건가요?
염성훈	윤석열 탄핵돼도, 권력·인사·정책 그대로 둘겁니까? 얼굴만 바뀌는 쇼만 하실 겁니까?
윤성원	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은 군대 안 가는 분들이 많습니까?
박인홍	선출직 공무원들의 부실 외유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 비용만 돌려주면 어떨까요?
서관순	국회의원이 특정 직업군에 쏠리지 않도록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영진	국회의원들은 돈이 많나요?
김원희	정치인이라면 국민 저변의 실질 의사를 확인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김리아	국회의원 수가 300명보다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도완영	국회의원 비서 수를 줄이고 대신 국회 사무처 인원을 늘여서 파견하면 어떨까요?
이준모	노무현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말할때가 되었습니다.
이현준	대통령은 왜 '대통령'일까요?
하준서	지나친 정년 보장은 독이 됩니다.
이동회	인사청문회 위법 후보자들 처벌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노청호	고위직은 왜 도덕성을 상실하고도 직을 유지하는가?
심재경	국회의원들이 왜 비밀투표를 하는가?
장규홍	감사원장을 국회에서 임명하자
김은희	나라의 얼굴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걱정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홍연희	이제 국민이 진정한 리더에게 힘을 모아 주면 좋겠습니다.
김태진	고위 공직자들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승도	선출직 공무원의 귀책사유(위법행위)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 선거비용을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왜 부담하게 하지 않을까?
김진태	국민깨 의제를 국힘당 김상욱 의원 보수주의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의견 주시십요
김기두	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아무나 될 수 있는가 아니면 국회의장,대법원장도 국민선거로 뽑으면 안 되는가?
김영범	국회의원이 최소한의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이 속한 지역명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부희	자신의 책임을 방조하는 고위공직자, 누가 월급주라고 허락했나요?
김익재	대통령, 총리, 장관, 판서, 검사 등 침익적 행정행위가 가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은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이성욱	고위직의 경우, 투표 등을 통한 선출직으로의 전환하고 국민소환을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화향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은 대통령의 논공행상용으로 활용?

방가영	대통령 출마자격 요건에 행정 경험을 포함해 주세요.
고정진	이재명 대표 2심 무죄는 기득권 세력과 법기술자들의 권력형 폭력입니다. 정의를 되찾아야하지 않을까요?
김우석	이재명 이기자! 대한민국 살리자!
김성읍	탄핵 기간 중 고위공무원 급여 중단 법률 제정 제안
윤지영	박균택, 한정애 의원님 태평한 소리좀 하지 마세요.
윤찬삼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은 선출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선출하는 것이 맞는가?
권나경	프랑스의 드골장군과 같은 지도자를 언제나 볼 수 있을까?
김정주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내지 상임위에 출석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회의원 급여를 삭감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희성	윤석열 복귀하면 이재명 죽게 될 것이다.
이민정	공무원 퇴직자 카르텔 근절을 위한 내부 고발 포상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정당비판

이진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서 우경화를 멈춰주십시오.
이돈희	박원순 성폭행 피해자에게 호소인으로 2차 가해 했던 정당이 이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죽은 고 오요안나 관련 청문회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로남불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병숙	친명 비명 반명 이란 단어들을 이번 대선에서 날려버릴수 있을까?
전재득	이재명 같은 뛰어난 지도자는 왜 이렇게 살아남기 힘든 사회 입니까?
오문영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의 정의를 재정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광희	국민의힘 당 잘못 그리고 참사에 대한 어정쩡한 진상규명?
안경수	우리나라 극우 집단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박상종	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지휘아래 정치적 사법적 탄압을 받는데 지켜보고만 있나요.
김재덕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법안)은 왜 정권만 바뀌면 정치 보복의 재물이 되어 사라져야 합니까?
박명훈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길들이기 했는데 왜 노무현 문제인 대통령은 안했나요?
문준호	이재명 대표님! 민주당은 페미들에게 왜 자꾸 이용 당해서 스스로 청년 남자들에게 등을 돌리십니까?
김상민	경상도, 특히 대구 경북의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재근	왜 중산층은 민주당을 싫어할까?
김형용	저는 종북도 아니고 빨갱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무조건 너는 빨갱이고 만약 아니라면 스스로 증명하라고 강요합니다.
김철규	어떻게 하면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으로 이어져 온 숭일매국 세력과 그 추종 반민주 극우폭도들을 완전히
	청산하여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나갈수 있을까요?
서승모	민주당 인사들은 왜 돈이 많으면, 비싼 부동산도 사면 비판을 왜 받아야 하는지?
서승모	민주당은 왜 민주당 간판 달고 나가는 방송 패널들을 관리 하지 않는가?
서승모	민주당은 언제 대의원 권리당원 권한 현 20 대 1을 1대 1로 할 예정인가요?
고태종	독립유공자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 이후 설치된 흉상의 위치가 왜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
황용식	이재명 대표님의 남부수도권 공약 현재도 유효한 공약일까요? 수도권 일극체제의 이원화 꼭 필요해 보입니다만
이문수	극우 유튜버들의 거짓말을 왜 맹목적으로 믿을까?
정유경	왜 당비납부는 매달 영수증 처럼 알려주면서 사용내역은 안보내주나요?
양성철	극우 유투버 및 사이비 종교집단의 준동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김환규	왜 '태극기 부대'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의 상징을 희화화하는지?
윤지용	지역적 이념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송엽	우리는 모두 2025년을 살고 있을까?
노청호	옳지 못한 일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박진홍	극우들의 무자비한 공격에 맞설 짧고도 간결한 논리는 무엇일까요?
최윤인	PC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안합니다.
길영순	민주정부는 왜 항상 나약한 것인가?
김동현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고 앞으로 해야 할 35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윤경자	전라도 사람들은 쓰레기인줄 알아도 울며 겨자먹기로 민주당을 뽑습니다. 바꿀수 없나요?
김대환	박근혜를 촛불로 탄핵시킨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윤석렬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나요?
김영호	왜 국가반란 외환유치 내란수괴 윤석렬의 정당 국민의 힘은 위헌정당 해산을 안 시키나요?
윤동환	민주당은 흉악범 사형을 실제로 검토하고 계신건가요?
박정영	저소득층의 국민들이 보수를 지지하는 까닭이 궁금합니다.
정찬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을 되돌아보고 당내 비판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나?
이대영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현 대한민국에서 기생하는 우경화 현상! 혐오적 파시즘 현상! 을 극복하기위한 해결책은?
임동현	왜 민주당은 내로남불 일까?
김석겸	선과 악의 싸움인데 당연히 선이 이겨야 할것 같은데 왜 항상 비슷하거나 지게 될까요?
홍순기	20·30대 청년 남성들 왜 극우보수의 선동에 쉽게 현혹되는가?
홍성태	총선 시 민주당에서 공천할 때 왜 100% 경선 안 하나요?
DANIEL W JUNG	탄핵 인용 후 국민의 함 해산 가능합니까?
이재준	왜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손절하지 않는가?
나순덕	왜 민주진보 진영에게만 도덕적 잣대가 엄격해야 하나
김충실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디에 있나요? 국민은 누구에게 기댈까요?
최정화	쿠테타를 일으키는 수괴를 비롯한 당원들 자격상실과 체포를 해야하지 않나요?
김영호	왜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주의인데 공산주의라고 내란독재자 박정희, 전두환, 윤석렬은 빨갱이 타령만 하나요?
김영호	왜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국민 아니면 독재의 부역자들 뿐인데 좌파 우파 좌익 우익타령만 하고 있나요?
안상학	민주당 의원, 시장들은 왜 민주당원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듣지 않는가?
우영창	문재인 정권과 그 당시 여당은 5년 동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윤장우	왜 민주당은 보수라는 단어를 빼앗겼나?
오길승	진보와 보수가 화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지훈	계엄에 맞서고자 달려간 시민1입니다 제 바람이 염치없는 욕심인지 판단해 주세요
홍창효	시민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추정하는 숫자는 왜 그렇게 다 다를까?
김영호	박근혜 키즈 내란반란범 윤석렬의 정당 대표 출신 이준석 좀 제명시킬 수 없나요?

김윤우	파시즘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
이순희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을 도구로 쓰라'고 했지만, 각자 자기 일을 잘하고 서로 존중하면 되지 않나요?
고평화	이재명 당 대표의 각종 소문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정도상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본산지인 대구경북이 왜 보수극우화되었을까?
조성택	국회에서 정당의 역할이 무엇인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투표에 대한 당 지시)
주성욱	이재명 대통령 되는게 우리나라의 꿈입니다.
박현우	탈이성적인 묻지마 지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있을까요?
전윤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민주당에서 탈당하지 않습니까?
김영호	13일날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범 윤석렬 폭동알바가 폭동을 일으키면 국민저항권으로 제압해도 되나요?
김영호	13일날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범 윤석렬의 폭동알바가 헌재에서 폭동알바를 하면 전원 국민저항권으로 폭동을 제압해도 되나요?
배용한	당원의 일은 무엇인가요? '동원 대상'에 머물러 있는 당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김영호	13일날 내란반란범 윤석렬민간인 김건희 유로폭동알바들이 헌재를 공격하면 국민저항권으로 전원 제압해도 되나요?
김덕수	극우도 극좌도 중도도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세요.
윤연상	20대 국민들에 대한 대책, 이런 건 어떨까요?
하지웅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표준이 되는 정당(Pivot Party)이 될 수 있을까요?
백정혜	보수당은 왜 맨날 말을 바꾸나요? 근무 태만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호성	왜 민주당은 정권을 잡았을 때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나요?
최창호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 각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을까?
엄광현	왜 정당이 있어야 하나요?
박용수	근거 없는 극단적 주장을 접했을 때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훈	악의 척결과 국민 통합 사이의 딜레마 해결 방안은?
신원철	지역주의는 언제 해결할수 있나요?
안정호	왜 좌파와 우파는 싸울까요?
배원빈	민주당은 PC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김정민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국민의 힘이라는 거악을 보아야 하나요?
류윤후	왜 교육이 보수 우경화를 만드는지 묻고 싶다.
박성민	극우가 되어가는 사람들 다른 나라는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어떤지 점검하고 빠르게 대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학영	탈북민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은 왜 없을까?
이지훈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12월3일 밤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조경호	민주당의 가치를 국가 시스템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은 가능한가?
강대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현재 국민들의 지지 성향 및 선거 구도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강대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현재의 국정 난국을 헤쳐 나갈 방법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신민재	최근 국회에서의 연설로 드러난 극좌 클릭은 중도층을 버리는 행위가 아닐까요?
김영호	왜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국민 아니면 독재부역자만 있는데 좌빨 우빨 빨갱이 극우라는 단어를 법으로 폐기처분하지 않나요?
백동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인데 왜 자신은 진보라고 우길까?
윤조왕	우리나라는 왜 극우주의를 넘어 파시즘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윤진득	극우 세력이 민주당의 잘못으로 오해할 만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면 합니다.
원남연	민주당은 사회적 과제를 나라에서 책임지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성진	일본과 미래지향적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서 공산당(빨갱이)와 미래지향적으로 친하게 지낼 수는 없나요?
이준민	보수정치인들은 왜 우익에 목을 멜까요?
김정민	민주당과 관련한 일을 하려면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어야 하나요?
DONG KIM	그놈의 빨갱이 타령은 언제 막을 내릴까요?
이승철	민주노총의 확성기 소음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은 제재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라
이석태	왜 민주당은 대중으로부터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평가를 받는가? 합의정신이 과연 옳은가?
임란아	역사 왜곡이 심화되어 가는 과정은 무엇일까?
오유경	정치는 왜 점점 더 양극화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본과 상식을 찾으려면 ?
shadow1313a	좌-우의 '심리적 내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명재	이재명 대표님의 자본주의 다음은 무엇일까요?
장찬영	민주당이 국힘이랑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야 중도층 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경희	지지하는 대통령과 정치체계 아래에서 따로 살면 안되나요?
최준호	민주당에서 내부 분란을 조장하는 세력을 품고 가는 것이 과연 통합일까?
김민석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정치인 자녀 관련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면 정치 보복이 될까요?
권제세	우리는 언제쯤 진정으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상학	문재인의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했는가?
구희성	민주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함 아닐까요?
김대용	국민의 힘은 왜 남탓만 하나요?
김동혁	당 색깔이 바뀌면 사회색깔도 바뀌나요?
이현정	국힘당이 보수당 이라 말하기도 챙피하네요
김혜미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각별히 여기고 마음을 쏟게 만들려면 사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가라뫼	민주당은 왜 자기가 보수당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김민석	민주당은 인구 소멸, 청년 자살률, 수능 기계만 키우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중산층이 못살길 바란다는 민주당 이런 평가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윤혜숙	당비를 1000원 내는 당원은 권리당원이 아닌가요?
신용배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니, 당의 노선이 바뀐 건가요?
조윤정	왜 내가 진보인가? 난 보수인데… 그들의 잣대를 이제는 거부한다.
김덕훈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이념과 관계가 있을까요?
김성호	과연 합치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신범진	민주진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안돼나요?
안호진	민주당은 왜 국민보다 미국의 뜻에 굴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혜린	민주당은 트럼프를 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셨나요?

박용식	이재명 대표님 경호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한돈규	국민의짐 언제쯤 해산 가능할까요
김중현	향후 5년 이내 50대가 보수 우경화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윤정은	갈라치기로 국민 분열을 만드는 보수정당.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권순호	당대표님께 전달한 물건이 잘 도착했는지 궁금합니다
장호삼	개신교의 극우화를 막을 수 없나요?
박지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자유관은 무엇입니까?
조동진	이재명 대표의 후덕함을 강조해 지지율을 올려야 합니다.
임희남	민주당원임에도 이재명 대표님 지지가 아닌 개헌만을 떠드는 건 아니지 않나요?
최준호	극우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김은주	한국의 민주주의는 전세계적 극우화의 흐름을 멈출 수 있는가?
이승민	권력 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민들만을 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나요?
김민정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강대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은 국회 의석 수를 200석 이상 확보하여 이 혼란한 정국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김진태	국힘당 진정 보수당은 새로 테어날 수 없는 가 ? 없다면 해체가 답이다!
한병진	민주당은 마약 외압 사건 특검 진행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나?
양희진	이재명 대표님 같은 정치인 또 나오려면?
임영규	용서는 언제해야 할까요?
김두봉	이재명 정부의 경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김두봉	이재명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은 선진 민주 정당에 부합하는 정당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
윤진득	우리는 광화문 극우 시위대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이영길	국민을 괴롭히는 법안을 제정하는 국회의원, 정당과 뜻을 같이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이재필	이재명 대선 슬로건 제안합니다.
박종식	대한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디쯤 있습니까?
박진하	강릉에서 이재명대표님 지지하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김민정	이재명 대표님 슬로건을 제안합니다.
이대송	지역당 개혁이 필요하다. 풀뿌리가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썩어 가고 있다.
연천희	개념의 혼돈 사회 어떻게 극복해야하나?
이준모	박원순 시장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민주당에서 이제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김하정	일반국민이 언제까지 윤대통령지지자들의 악플과 횡포를 견뎌야하나요?
배영철	평당원에서 권리당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대삼	민주당은 검찰,사법 쿠데타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김진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동조 세력인 국힘당에게 국민 혈세 지급을 중지할 수는 없나요?
설민영	꼭 민주당은 모든 사람과 통합해야 하나요?
김새롬	만약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다당제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임희남	민주당은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김새롬	이번 정권에 녹색당이 환경부 장관을 배출할 수 있을까?
김형일	극우 파시스트가 없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건가요?
성수아	당내 경선이나 각종 투표에서 여론조사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성수아	왜 우리 사회는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불편하게 되었을까요?
이명옥	민주당과 정통보수의 토론의 장을 자주 열어주세요.
심재경	이재명 당대표는 대한민국의 사활을 책임진 공인으로서 대선이 끝날때까지 신변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정수락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정권 창출을 해주십시오.
이성규	뉴스보다 속터져서 글씁니다. 국힘 뉴스 댓글 좌표 언제까지 봐야되는지
엄태현	한국은 과연 다당제인가
강대삼	이재명 대표, 민주당, 국민들께 호소 합니다
이원홍	민주당은 진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우진	민주당 지지자 분들 중 "개딸" 이란 별칭에 대한 어휘 변경에 대해 의견드립니다.
장찬영	민주당에 하고 싶은말 남깁니다.
이혜린	민주당의 의중이 궁금합니다.
강윤정	민주당172명 국회의원 집회 참여도
류우승	민주당은 미국에 눈치보면 안 됩니다.
박근호	민주당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정향기	종북의 프레임을 벗어날수 있는 방법은?
윤지용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증오를 부추겨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거나 확장하려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런 자들은 척결의 대상일까요? 관용하고
	포용해야 할 대상일까요?
임희남	민주당 의원님들은 개인 페이스북이나 방송에나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성명운 공식적으로 내시지않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박경석	최근의 친북, 종북 논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요?
강치봉	이재명 대표님 방검복 꼭 입어야 하나요?
박규삼	국정이 난맥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왜 해결못하나?
유현민	어째서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논하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는가
임미영	청송군에 저희 친정엄마가 계십니다.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데 도와주실 수 없나요?
정혜수	민주당 내부에서 역풍 역풍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왜 이렇게 또 답답하게 움직이나요? 수박이 아직도 있나요?
이현정	새로운 당원분들도 많이 들어온것 같은데 앞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길...
심재경	이재명 대표의 경호 관리의 허술함에 관하여 쓴소리
박규삼	현재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주당을 언터처블하게 변하게 할 방법은?

정치개혁

홍대호	대한민국의 민족과 역사를 배신한 친일파 청산은 왜 이뤄지지 않나요?
박문혁	왜 우리는 일제청산을 못할까?

김태기	최근 불법 계엄과 탄핵 이후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중학교 학생들이....
이은규	왜 대한민국은 과거청산을 못하나요?
오준영	대통령제가 아닌 정치체제는 나쁜가요?
이영진	정치를 AI가 하면 안될까요??
이용석	친일파 뉴라이트 는 청산을 언제하나요?
서민경	친일을 조장하는 유투버들 왜 가만 나둡니까
손재수	왜 친일청산이 안 될까요?
권영민	친일파보다는 매국노, 앞잡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지 않나요?
최영희	정치 고위관직의 친일파들은 왜 곳곳에 있나요? 뉴라이트등 친일 매국노들이 버젓히 떵떵 거리고 사는 세상이 싫습니다.
김병철	대한민국이라는 리그에서 부패한 심판이 어떻게 공정한 심판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배상철	왜 전관예우를 두고보고 있는가?
임성호	대한민국의 주적은 과연 누구이며 무엇인가?
정의필	미래세대가 친일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황정수	민족반역자 친일파들을 청산하고 그 후손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데.. 어떻게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까?
박주형	해방 이후 친일을 청산하지 못해 일그러진 대한민국의 역사를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이혜정	정부 부처의 민간 위탁 기관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데, 바뀔 수 있을까요?
위진환	권력과 종교를 분리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김영호	왜 일본의 후원금을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지 못하나요?
송순희	기독교의 일부 목사님들은 왜 극우로 치우쳐 교인들을 세뇌할까요?
박금진	개신교의 극우화는 왜 일어나고 있는가?
현영호	판검사 및 고위 공직자 퇴직 후 기업 및 로펌 재취업 금지 법안을 제안합니다.
권순학	이상한 종교는 늘 존재했는데 요즘은 극우화 과격화 대규모화되어 양지에서 활동하는가
박태인	전관예우라는 뇌물죄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박진표	현 시대에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상은	많이 배운 사람들 검찰 국무위원들이 왜 정직하지 않고 바르지 않은가 왜 도덕적이지 못한가요?
노청호	방산 수의 계약은 어떻게 가능한가?
유명규	정부 기관이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은?
OMENA	좋은 정치인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배건식	현재부터 미래의 국가방위 정책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권준언	국민을 천시하고 탄압해온 세력들의 득세와 그 세습은 일제 청산을 하지 못한 댓가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청산하지 못한 실수로 영영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임유식	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국정 사업은 무엇일까요?
이해길	친일파 뿌리뽑읍시다. 경호처 관할 국회에서 할수없나요?
정윤성	국회 교섭단체 인원 수를 10명으로 줄이면 어떨까?
이정희	친일파는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야 하지 않나요?
박선진	엘리트 카르텔, 부정부패로 돈 번 자들, 재산환수법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권택환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을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황락	친일파 청산은 어떻게 해야 하고, 앞으로 발생할 친일파들은 어떻게 제어해야 할까요?
최재문	대한민국을 균형발전하겠다 하지만, 결국 수도권에 집중하는 정책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일천	여야 합의를 거치면 법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세요.
김준현	일본 간첩이 국내에 있다면 이는 간첩죄로 국가보안법 적용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김주원	12.3비상계엄으로 확인된 군의 육사 카르텔을 막을 수는 없을까?
김맹후	한국의 극우는 왜 기독교인이 주도하는가?
김영호	왜 대한민국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에도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나요?
강종완	공수처를 정상화 시키는 플랜이 있습니까?
김미선	윤석열 탄핵 이후, 어떻게 썩은 상처들을 도려내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동규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매국노들은 왜 정리 이장되지 않는 걸까?
임현아	여기있는 질문들 우리 국민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부패카르텔이 억압하고 있습니다.
신현재	이제라도 친일청산을 하고 친일재산환수를 하려면 어찌해야 하나?
김국호	전관예우. 공소시효가 없는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도덕사회는 누가 만드는가?
김다연	헌재를 파괴하라는 기독교 집회, 국민의 힘 집회를 왜 막지 않나요?
김성희	극우 카르텔을 어떻게 초기(?)에 세력 약화시킬 수 있을까요?
문현	어떻게 젊은 세대 (특히2030남성)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미선	종교계가 정치에 적극 개입해도 될까요?
CHRIS LEE	적폐청산은 가능한가?
박정현	적폐 청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춘환	역대 대통령 비자금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고로 환수해 주십시오.
김범철	부정부패한 관리/ 공공기관 / 금융기관들의 처벌 및 재산환수제도 및 평생추적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 창설
서태욱	공무원 카르텔과 부정부패 점조직을 왜 끊지 못합니까?
김순태	반헌법적 모습까지 보이는 극우세력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은 다당제로 발전이 아닐까?
김성욱	공무 수행 차량이 저지르는 위법 행위를 제대로 처벌해야 하지 않나요?
송의진	돈 안드는 정치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김영호	국가반란 외환유치 내란반란국정농단범 전두환 노태우이명박박근혜를 사면해서 내란반란범 윤석렬이 나온건 아닌가요?
김영호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수괴 윤석렬 민간인 김건희를 사형선고하고 또 사면할 건가요?
이호형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반드시 과반수를 확보한 당에서 다 차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광명	잔존 일본인을 고향으로 보내주자
김영호	왜 당장 학연, 지연, 혈연 이용 금지법을 안 만드나요?
정광수	경상남도 합천군에는 왜 부정부패가 심할까요? 대부분의 시골은 뇌물 인맥 돈으로 지배되는 건가요?
김영호	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일본의 로비후원일체금지법을 당장 안 만드나요?
김영호	왜 부정부패의 시작점인 선배후배이용금지법을 당장 안 만드나요?

황민수	진보는 왜 가난한가?
김선일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조경호	검찰과 경찰이 정치적 편파성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힘을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곽대종	왜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계 순위가 행정부 고위직 순서로 되어야 하나요?
정선욱	잔류일본인은 얼마나 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김민석	보통 선거, 평등 선거의 원칙은 과연 옳은가?
안상학	종교지도자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진호	수많은 위원회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종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대송	공공부문의 카르텔은 부패와부조리의 원천이다. 없앨 수 없을 까?
박은영	명태균 관련 특검을 빨리 할 순 없나요?
백승일	공무원 녹취 또는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하여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건 어떨까요?
김동환	우리나라 정치가 극단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깅청란	개신교 극우세력들은 왜 무슨목적이 있어 사회를 정치 이념화시킬까?
shinhyunmin6937	왜 공천제도라는 병폐를 끼고 살죠?
새미새미-g4f	현실 정치는 정말 바뀔 수 있을까?
마메듬-h9x	우리 나라는 어째서 정치가 가장 후진 나라가 됐을 까요?
김혜영	윤석렬이는 탄핵될 것이고, 그 이후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 정권은 어떤 정권이 될 것인가요?
민하기	반민특위를 부활시켜 친일 잔재를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김새롬	우리는 광복 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데 실패했었다. 이번에 내란 세력은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이현정	요즘 사람들 정치권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던데 다들 빨리 안정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권제세	정치인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선주	왜 국가보안법에 식민지 미화 독제미화 처벌조항은 없나요?
박세진	돈으로 장난친 범죄자의 재산은 왜 몰수하지 않나요? 친일파의 재산 몰수 모두 왜 하지 않나요?
양동원	대통령 부제시 왜 선출된 권력 서열이 아닌 행정부 서열인가요?
강민중	정권이 바뀌면 말도 안되는 특별사면을 하는가요?
박성호	지금의 정치 제도가 최선일까요?
노민호	우리는 왜 제대된 정치인을 육성하는 시스템을 가질 수 없는가?
장호용	국외에서 들어오는 빈 컨테이너 속에 들어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송정한	강남구청의 마약 관련 비리를 전담 마크할 수 있는 국제 기관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김현숙	한국의 고위층 엘리트 집단은 왜 쉽게 부패하나요?
권용재	우리는 왜 국립묘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가?
김영임	토착 친일 매국 세력을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개인은 어떻게 이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김지애	친일파와 매국노들의 재산 환수는 언제되나요?
이유	경찰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유성	친일파 재산 왜 환수 안하나요 ?
박인수	민간협회의 의무가입과 갑질 그리고 세력화를 막아주세요 특히 공공과 관련된 협회들의 횡포를 없앨 수 없을까요?
이대성	대통령이 경호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김지애	국립현충원에 왜 친일과 매국한 자들이 함께 안장되어 있나요?
하수환	왜 우리는 민족반역자들이 아직도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가?
조규봉	상설특검 임명을 국무총리가 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정재일	위헌 정당이 계속 법적 보호를 받으며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준호	왜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을까?
강대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근현대 역사 교육을 강화해 정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marine153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윤연정	불매 대상이 주류를 이루는 이 모순을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박상덕	수많은 정치인들이 매일같이 열겠다는 새 시대는 왜? 아직 열리지 않았나요?
박성우	일제강점기 때 적극적으로 친일 매국 활동을 했던 자들에게 수여한 국가 훈장과 포장, 국립현충원 안장을 취소 및 회수 할 수 없을까?
이예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언제쯤?
황미심	다시 살고 싶은데 정책이 손을 뿌리치네요.
윤석준	앞으로 새로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김지수	종교가 정치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박민수	도대체가!!! 공수처 인원은 언제 충원 해 줄 껍니까?
오순이	왜 우리 민주주의는 관존민비에서 민존관비로 바뀌지 않나요?
이원홍	대한민국 부정부패한 반란세력이 만들어진 과정에 우리는 무엇을 논해야 하는가?
김새롬	왜 윤정권이 등장하게 된 근원적 이유에 대하여 왜 사회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고찰하지 않을까?
성수아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 등을 저질렀을 때 수사기관과 권력승계순위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도완영	독립 운동을 하면 3대가 가난하다. 이 말이 지금 현실에도 살아 있는게 옳은가요?
김현정	의전이 꼭 필요한가요?
박영진	종교계가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면 더 이상 비과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박세진	아예 내란이라는 것을 꿈도 못꾸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진형	사법권력 부패,종교권력 부패,정치권력 부패, 언론권력 부패 등 각종 권력 기관들 정화를 위해서는 각 권력집단의 힘을 박탈할수 있도록 주권자인 국민에게
	물을수 있게 국민투표 대상을 확대하면 안될까요?
장영희	제2의 윤석열 방지하기 위해..대선 토론의 방식. 회수. 시간. 내용을 제도화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종훈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그리고 차기 정부는?
임상현	아빠, 그러면 그 때 친일파들은 어떻게 됐어?
김종수	적폐 친일뉴라이트 재산몰수 + 공무원 못되게 해야한다
이원홍	서민들이 취업을 꿈꾸는 이유, 고위층의 특혜 채용이 만든 현실을 개선해주세요.
최미희	정치인들이 교회에 굴종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김선홍	신반민특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버넌스 혁신	
김남국	공직자들은 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할까요?
하호성	국회에서 투표 방식을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건 어려운가요?
하준서	연금 투자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 부문 확충에 투입하는 것이 실질적인 연금 혜택 아닐까요?
김영열	대통령의 사면권 이대로 괜찮을까?
엄상진	교사도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내는 나라 가능할까요?
정광섭	청와대 원상회복이 시급하다.
홍창효	왜 현직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을 해도 중임이 불가능한가요?
안창근	다음 대통령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김성두	세금을 아끼는 공무원에게 가점을 줄수 없나요?
최정환	군무원, 장교, 부사관 처우 개선과 국방력 강화를 함께 도모할 방법이 뭘까요?
김두영	왜 시골 공무원들은 약자한테 더 강할까? 강자한테는 약하고.
박호철	5년마다 대선. 문제 있지 않나요?
이상욱	현재의 공무원 임용제도(필기시험과 면접)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사회경험과 사회경력이 반영한 임용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영호	왜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 범죄에 대한 가외성으로 부통령제도를 만들지 못한 것인가요?
김영호	왜 대한민국은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에 대한 정당가입금지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나요?
이명희	대통령관저 이동으로 인한 비용은 국민이 책임지는 것이 맞나요?
민문식	5급 고시제도를 바꿀 수는 없을까요?
김기연	현재의 공무원 채용 시험은 서비스 정신과 책임 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이송엽	국회를 경비하는 경찰경비대는 왜 국회의장 직속이 아닌가?
최재철	쿠데타가 불가능하게 구조적으로 만들수 있습니까?
양유미	왜? 공무원들은 새로 도입된 법을 공부를 안하나요?
조선우	경호처 김성훈과 이광우를 직위해제 해야 합니다.
이정훈	공무원 순환 보직 제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현 사회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김덕겸	내란 수괴,외환 수괴 범죄자가 대통령일 경우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있나요?
김덕겸	공정해야 하는 자리의 인물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윤	정부사업(민간,군수) 입찰제는 꼭 최저가로만 선택 되어야 하나요?
정주환	관료제 조직 체제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하급자가 받은 인사 상의 불이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김정민	국정농단 엄벌에 처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양준구	정의롭고 발전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보상 승진 체계는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할까요?
염성훈	군과 경찰 그리고 검찰 등 여러 국가기관이 왜 기회주의자에게 유리한 조직을 유지 하고 있습니까?
윤지석	대통령 중임제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김영호	이재명 선출직 공무원이 대통령이 되어서 내란반란범 윤석렬을 박근혜처럼 사면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인아	새정부에선 정부의 구조와 시스템 프로세스를 바꿔야 합니다!
박은영	대통령은 왜 중임이 안되나요?
김영호	박근혜처럼 내란수괴 윤석렬을 사면하면 국민저항권을 사용해도 되나요?
김영호	왜 내란반란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윤석렬의 잔재를 똑바로 뿌리뽑지 못하나요?
강은성	공무원은 왜 정치중립의 의무가 있는걸까요?
정윤아	대통령의 사면권을 뭐하러 만들었나?
김영호	이재명 선출직 공무원은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범 윤석렬 민간인 김건희를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처럼 사면할 건가요?
김한상	공공기관 감사 기관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
홍창효	공직자 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할 순 없을까?
김영호	왜 내란반람범 윤석렬민간인 김건희의 내란반에 대한 항명퇴직을 했는데 퇴직공직자 재산신고를 해야하나요?
김귀옥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가능할까요?
홍순혁	계엄 같은 비상 사태를 대비해, 국회의원들이 온라인으로 투표를 통해 결의하는 법안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정구현	청와대에 다시 입주하시나요?
김봉학	무너지지 않는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김영민	왜 지역구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스템이 다를까요? (예 : 폭설)
김일섭	행정구역 조정은 왜 안 하는가?
윤재수	국회발의 특검의 정부 승인 요청이 정당하고 합리적인가?
곽대종	왜 모든 중앙 부처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에 인쇄된 신문을 그것도 각 부서별로 소속 기관의 예산을 지원해서 구독해야 하나요?
김현숙	우리나라에서 대형 사고가 나면 수습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가?
지재용	공공기관들은 당해년도 예산을 왜 꼭 무리해서 소모해야 하나요 ?
임동민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쿠데타가 우리나라에서 왜 일어났을까요?
김영호	왜 일반행정9급은 말도 안되는 인원적채라는 변명으로 1년을 경제적피해를 당하면서 선출직 공무원들과 임용의 차별을 지금도 계속 받아야하나요?
이종준	수도 이전을 검토하고 추진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동회	모든 지명직 공무원 및 산하 단체 임직원 정년을 민간 기업과 동일하게 60세로 제한합시다.
안상학	정치여론조사는 한가지만 질문하지 못하는가?
김영호	이재명 선출직공무원님은 대통령이 되시면 사형선고받은 전두환처럼 윤석렬을 사면하실 건가요?
김홍업	70년대 이후 모든 정부가 내세웠던 주요 정책들이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user-orangey1004	교사는 왜 정치적 금치산자로 살아야 하는가?
김새롬	공무원 순환보직은 언제부터 왜 시작되었고, 언제까지 계속될까?
윤찬삼	왜 전면 비례대표제를 안 하죠?
정성욱	정부의 운영 시스템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변경되면 좋겠습니다.
이동회	대통령 사면권에서 내란 외환죄는 영원히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민정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박응진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집무실과 관저는 어디가 되나요?
홍순근	정부 각 부처별 유사 또는 기타공공기관의 인사 및 행정업무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김민석	이번에 국가개조를 못이룩하면 한국은 미얀마처럼 될겁니다.
김혁수	공무원들은 왜 정치활동을 못하나요?

최철호	일하지 않아도 되는 필요없는 공공기관의 직책들을 없애거나 줄일 수는 없나요
최소현	공공기관 용어는 왜 어려운가요?
신호순	사회적 의사 결정이 공동의 선으로 수렴되는 의사 결정 체계를 갖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원철	공무원 채용 시스템 변경해야 하지 않나요?
양희진	국기를 바꾸면 안될까요? 태극기에서 다른 걸로요.
박준영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신 국회의원이 투표하여 임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아미	문제 많은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는 왜 점검하지 않나요?
장규홍	대통령실을 대통령 마음대로 옮겨도 되나요?
김광득	개헌해서 대통령 중임제로 가야 합니다.
이동회	개헌의 단골메뉴인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당키나 한 것인가?
김춘남	새 정권이 출범하면 검찰, 언론, 인사 개혁에 나서 주세요.
장규홍	정부조직과 관변 조직의 비대화의 문제점과 축소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은
윤명희	좋은 정책이라도 연속성이 없으면 국민이 피해를 보니, 정책의 시행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다.
남창명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나요?
윤대홍	시청의 월권 행위가 아닌지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 민주당의 도움을 구합니다.
김세진	행정 서비스 혜택을 국민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해요.
윤진득	국회에서 위증하거나 불출석하는 공무원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최인남	행정소송 끝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소송 결과를 시청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진	바보놀음하는 공직자 진급까지 하는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하준서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 행정직 공무원이 공수처를 압색한다니 위계질서가 엉망진창이지 않나요?
김진태	또다시 계엄을 겪지 않도록 대통령 후보의 자격 조건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혜환	절대적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행정 및 정책방향, 방향전환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회 창출을 기대해봅니다.
유오식	정권이나 단체장이 바뀌면 제 멋대로 변경되는 행정 정책이 혼란스럽습니다.
윤성원	왜 공무원은 전문가가 없는가?
윤성원	세상은 바뀌는데 공공기관 조직은 왜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을까?
윤성원	왜 정부는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고 할까요? 정부 역할의 책임 회피 아닌가요?
김중곤	대통령 집무실과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김민승	시의원 발의로 공공예산 감소 시 누구 때문에 예산이 줄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현근	공무원 고시를 철폐하고 현장을 아는 사람이 승진하여 고위 공무원이 되는 게 맞다.
김두봉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은 어디가 좋을까요 ?
도완영	공무원 탄핵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적다는데 그건 국회가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걸까요?
정미진	정부 정책이나 지원 내용들을 한곳에서 찾을수 없을까요?
정미진	국가 정책 지원이 한세대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 세대가 소외되지 않게 각각의 세대에 맞게 균형있는 지원 정책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김승아	시청 우체국 은행 등등 업무시간 관련하여 드릴 말씀이 있어요
김승아	군대 경찰 공무원 교직원 등등 임명할 때 임명권자를 바꾸면 좋겠어요.
김상국	공공기관 수의계약 최대 금액이 2천만원인데 20년 이상 변하지 않나요?
김세진	구속되어 징역살이하는데 월급 받는게 말이됩니까?
노청호	왜 마음대로 공무원 인사를 하느냐?
노청호	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밑에 사람에게 떠넘기는가?
노청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매국행위를 범했을시 감옥뿐만아니라 국가에 손해를 낸것의 100배를 환수해야되는것이 아닌가
이동회	국립해양과학관 공무원을 엄히 처벌해 주시고 공무원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노청호	왜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하는 것보다 상사의 이익을 우선하는가?
양중식	공직자의 거짓말이 의심되면 2주 내에 진실 여부를 밝히고 조치했으면 합니다.
이은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한다
성수아	전관예우를 타파할 수 방법이 없을까요?
성수아	일 안하고 고액연봉을 받는 낙하산 공무원직을 없앨 수는 없나요?
노청호	공직자들은 왜 공정하지 않은가?
박용성	대내외적 현안의 해결 및 연착륙을 위해 담당 차관보를 확대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차현철	위원회 운영 이대로 좋은지요?
박정현	비선출 소수의 헌재 판관들에게 대통령 파면권을 주는 현행 헌법 문제 없는가?
변소영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기제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지자체 임기제 공무원은 대체로 임용 5년이 지나면 재채용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때 채용이
	돼 다시 임용되면 신규채용이라는 이유로 연봉을 직급 하한(미니엄)선으로 책정합니다. 당장의 생계가 급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재계약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박용성	<국가역사위원회> 통해서 국가 정체성 확인/국민 지혜 모아야!
한종희	공무원, 공직자 매년 봉사 및 적성검사 도입해야하지 않나요?
이정삼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에서 다권분립으로 가야 선진국이되고 확고해진다.
이세경	모두의 현재 권리를 내려놓고 제로베이스 세팅을 할 각오가 되어있을까요?
남궁진	대한민국은 민주화 되어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속의 각각의 개별 기업, 조직 내 민주화는 진행되고 있는가
한승협	현직 공무원입니다. 초과근무 총량제 말이 되나요?
이원홍	공무직 고용방식의 변화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daha5101	공공기관들은 공공의 하나하나 개인이 아니라 권력자의 쪽에 서는가? 모든 피해는 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가?
최미희	군의회 대신 '민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함인호	공무원 채용 시 가치관은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
유현석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을때는 국민이 뽑은 국회가 권력을 이양받는 법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부정책	
이원홍	강력한 처벌과 재산 몰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창훈	내란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환수하고 법정 최고 이율을 적용하여 환수를 막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황의홍	각 정부 부처에서 매년 요구하는 예산 내역은 객관적인가?
홍석환	정부 홈페이지의 거짓자료, 왜 고쳐지지 않을까요?

이성철	정부의 태극마크 로고는 뉴라이트가 훼손한 것입니다.
윤성원	왜 정부 정책에는 연구개발이 없을까요? - 정책에도 실험이 필요합니다
신중원	국방의 의무는 적절한가? 전쟁나면 진짜 이길까?
황대용	정책과 법안의 유통기한은 왜 없나요?
이형석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박동혁	청와대를 복구 할 수 없나요?
남진희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사와 판사를 어떻게 견제해야 할까요?
최가라뫼	법안 표절 심사하는 건 어떨까요?
박민우	국회 단전 시 왜 동영상 검증 안 했나요?!! 119 있었음
임금희	태극기 대체물은 없을까요?
박문석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
김세진	정책의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윤재호	일하지 않는 국민도 정부가 부양해야하는가?
박용식	대통령이 되시면 공약 이행률이 높을까요?
김건우	왜 모든 정책들이 나이를 기준으로 하나요?
김민규	정당이 국가의 분야별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제도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순 없을까요?
이영철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또는 대한국) 아닙니까?
김두봉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행복부가 신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홍세원	우리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장천석	국민신문고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용만	외무고시를 다시 부활하면 안될까요?
이대송	공공기관 규모 및 인사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익환	연좌제의 특화적 부활이 필요합니다.
김세진	공직자들의 인사자격기준이 바뀌야 합니다.
노청호	심우정 딸, 자격 미달인데 국립외교원 채용이 어떻게 가능한가?
고정진	민주주의 주제로 소설이나 애니를 이야기 한다면 꼭 언급되어야 작품 : 은하영웅전설에 관해서...
정일형	왜 서로 다른 정당 및 사람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막을 수 없나요?
문성훈	길거리 현수막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김성진	거리의 정당현수막이 보기에 좋은가요?
홍성민	극우 현수막은 왜 계속 허용되나요?
김지현	길거리에 정치인들의 가짜 뉴스 현수막, 헐뜻는 내용의 현수막이 꼴보기 싫습니다. 현수막 정치를 막아주세요.
박해얼	정치 현수막의 비용을 공개해주세요
강수연	정당 현수막의 문구는 왜 제재할 조치가 없는 건가요?
문정례	정치 현수막 게시로 인한 고통을 언제까지 당해야하나요?
박우진	왜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은 법적으로 자유로운가요?
홍순업	민주당 현수막 관리 이대로 좋은가?
임강빈	플래카드, 그만 겁시다. 대표적인 세금 낭비

정치제도

유승재	선거제도 시스템을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바꾸면 안될까요?
이우혁	전 국민 <모바일투표제>를 모든 선거와 여론조사에 왜 전면 실시하지 않나요?
차기수	다수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 완전한 방식인가요?
이해인	앞으로 대선은 반드시 역사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도록 의무토론 하면 안될까요?
오기석	대통령 선거전 후보검증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조세현	현행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는 문제점이 없나요?
김은주	부정선거 이슈로 나라 전체를 혼돈 속으로 밀어 넣었는데요.
강태관	투표소현장 수개표 해주십시오.
정원일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한꺼번에 하면 안되나요?
강승원	소선거구제로의 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조서영	우리는 투표를 꼭 종이로만 해야 합니까?
권경훈	연령에 의한 선거권(투표권) 취득은 과연 합리적인가?
김철	투표 행위도 보상받아야 합니다.
김미애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유성오	완벽한 투개표 시스템은 무엇인가?
한승협	반헌법 세력이 힘을 키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창규	부정선거 의혹 차단을 위해 사전투표, 전산투표는 없애고 대만 방식의 수개표로 해야 한다.
김동락	행정 경험이 있고 국민에게 검증받은 적 있는 사람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준규	지방선거는 왜 시장,도지사, 군수 등을 견제해야하는 의원들과 같이 선출하나요?
공은주	위헌 정당 해산은 국민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김주연	왜 투표권은 평등하게 부여되나요?
윤성원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 미래를 위한 정치, '선거 연령 상한제'
엄애란	부정선거 방지로 개인폰에 지문으로하는 선거방법은 가능할까요?
이동근	보궐선거 비용을 당선 무효자가 부담했으면 합니다.
이준모	전자개표기 폐기하고 투표소에서 수개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박승원	부정투표와 부정투표 논란을 봉쇄하는 투표 방법
김상희	보궐선거 공고를 대통령대행이 하지않고 버틸 경우에 대한 대비는 되어있는가?
박용성	국회 <상임/특별/소위원회> 회의체 운영개혁에 대하여!
박용성	헌법 <국회 상원하원 감사원 예산처 입법처> 준비할 때!
김호굉	유효투표 50% 미만이라면 국회의원도 없다: 국회의원 유효 선출기준 재정립
노승현	3부요인들을 모두 직선제 투표로 뽑는건 왜 안될까요?

임상현	어째서 아이들은 투표 할 수 없나요?
박규삼	선거범죄 100만원 이상으로 선거권, 파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 보인다. 적당한 선은? 난 좋은 대표자를 갖고 싶다.
이영준	국회는 당을 해체해야 합니다.
유민경	지도층이 헌법을 지키지 않아 헌정질서가 무너질때, 헌법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게 옳을까요?
이민주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대통령 4년중임제 등 원포인트 개헌은 어떤가요?
김태진	헌재의 결정이 어떠하든 헌재의 시간이 끝나면 마지막 남은 질서와 시스템은 국회입니다. 더 단단한 각오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방분권

김영준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지방 정치인들을 평가하고 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박세종	지방자치 행정의 노령화 퇴화현상? - 공공계약에 있어 대부분의 (수기계약) 및 (계약서 생략)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전자계약 및 2인수의의 최소한의 경쟁으로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김주송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할까요?
김선희	동 면장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선출할 수 없는가?
황숙	지방자치제의 부정적 요소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중간 평가를 내리고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재호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당 차원의 컨설팅은 불가능한가요?
박홍진	지방자치제는 지역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가?
남궁호	이번 기회를 통해 대통령실을 용산에서 세종으로 이전하여 행정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계기로 산업 구조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최승복	지방 살리기를 중앙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응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내 가칭 의정 모니터링단(또는 감시단) 조직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신명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지방이 수도권보다 더 어려운 조건입니다. 지방에서 사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지방에서 민주주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상률	지방소멸은 공멸입니다. 적극적 활동가형 리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한섭	구단위 군단위 자치제가 필요한가?
서관순	전남지역 지자체장 선정 문제 없는가?
남형수	어느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전우진	지자체에 대한 자발적 시민 감시를 통해 부정,비리, 부패를 방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완진	전국 지자체 공중선 준법정비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순	왜 주민자치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인가?
박갑수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의회 부정부패를 어떻게 하면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김경자	지방자치가 지방독재로 나가지 않도록 자치를 존중하면서도 명백한 위법에 대해 중앙 정부가 감독권을 유기하지 않을 방안 없을까요?

사회 및 복지

복지수혜자

김종택	정말 좋습니다. 질문을 드리게되어 좋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
신일섭	청년/노인 정책은 넘쳐나는데 왜 4050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까?
정덕현	갈곳 없는 초등학생 자녀를 어찌 해야 할까요.....
김준희	단일 장애3급도 언제쯤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오지호	노인정 경로당 이대로 괜찮은가?
하준서	어르신 주도적 복지는 불가능한 것 인가?
장수경	청년, 노령자가 아닌 40~50대를 위한 경제적 지원책은 없을까요?
손진형	사회복지사는 돈을 많이 벌면 안되나요?
최선은	어르신들을 위한 어른이집은 왜 없나요?
윤혜중	우리나라는 왜 독일처럼 반려동물 키우기가 안되는 걸까요?
윤성혜	중년, 노년 1인 가구에 대한 복지(간병,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정수미	맞벌이 부부에게 사교육은 필수적일까?
윤여연	경증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최은주	피해자들은 왜 늘 가난한 시민여야 하나요?
이용태	노인복지를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는 없나요?
강산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왜 보장해 주지 않는 거죠?
성언석	세상사람들은 나를 장애인이라 생각하는데 왜 나라는 나를 장애인이라 인정 안해줄까?
임준택	아이가 클 수록 키우기 너무 힘드네요. 제한된 경제력 속에서 자녀 셋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원진	근로장려금 왜? 부채는 안 보나요?
홍민우	정신장애인, 미성년자, 치매 노인 등을 위한 공공 후견 예산 증액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우지영	동물복지 강화 및 동물권 보호를 요청합니다
이가경	450대는 유령입니까?
오성호	방학때도 점심 급식을 할 수는 없을까요?
김주원	노인빈곤, 노인복지, 노인고용에 대해 우리는 충분한 고민과 대비를 하고 있는가?
임서이	우리 아이도 잘 살수 있을까요?
양은영	현재의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미래의 저소득자로 묶어 두려는 것처럼 보인다.
김미선	외국인들의 특혜 정책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미선	집에서 근로를 포기하고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이강희	왜 청년인데 청년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왜 신혼부부 인데 신혼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김이령	시각 장애인이 시청각 영상이나 시각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 서비스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채은	동물이 행복하고 생명을 존중받는 사회는 언제 올까요?
박재민	최소한의 먹고 사는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노후는 온전히 개인의 책임인것인가요?
김유경	노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 노인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김영호	왜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방치하나요? 동두천에 아프리카 불법체류자들이 넘쳐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대호	정신장애인은 고물보다 못한 존재인가요?
김학수	민생복지 지원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김택수	고령 노인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없나요?
이경훈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게 학생할인을 확대하지 않습니까?
김영환	장애인은 왜 등급을 나눠져야 하나요?
김지은	여성, 여성의제, 여성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휘린	아동복지의 열악함, 아동복지에서 일하는 돌봄교사, 보육교사는 열악함 속에서 언제까지 사명감으로만 일해야 하나요?
김민영	청년혜택/정책은 왜 부모님의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방수진	중증지적장애를 가진 내 아이는 내가 죽은 뒤에도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권현민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과 주차방해. 국회의원들이 멍청한 법을 만들고도 왜 사과와 반성을 안 하는 것인가요?
오홍균	유기견 유기묘를 위한 소액 결제 APP으로 스마트한 지원 사업이 가능하지 않은지?
정영순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혼자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아이들에게 잘살아 갈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 즉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박병복	노인이란 단어를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양우	농민 기본급 월 100만원 할 수 없을까요?
김순금	고령화 사회로 가는 시대를 위한 특별한 복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이건석	왜 남태령대첩에서 승리한 농업인들은 항상 가난해야 되나요?
황병준	세째아 가족 소득에 상관없이 대학교 학자금 지원 하느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주세요.
정민금	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40대 중년세대를 위한 지원 정책은 없는가?
박한아	청년 나이를 만39세가 아닌 좀 더 올려줄수 없을까요? ㅠㅠ
김영호	왜 1인가구가 일상인 지금 채용란에 비상연락망을 적으라고 하나요? 완전히 혼자인 1인가구도 많은데요?
김귀옥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5년 늦추고 그것을 20세 청년들에게 5년간 지급하는건 어떤지요?
윤지석	법적기준 노인 나이 65세가 적절한가요?
이종태	저는 40년째 기초수급자를 신청하고픈 백수 입니다
박상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 시점. 대한민국은 은퇴하는 세대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정년 연장만이 답일까요?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하영	4050세대를 위한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인보라	아이들이 전자담배를 사는 방법,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안기창	점차 고령화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대다수 노인들의 생계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승석	일상의 풍경이 되어버린 시골 경로당 유모차부대! 이게 정상일까요?
임경진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23년을 맞벌이로 일하고 있는데, 여전히 노후 준비가 안되어있어 은퇴할 수가 없다.
이주연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 우리니라는 관련 제재법을 만들지 않는가?
마상욱	다문화가정과 귀화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녹아들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지우	엄마들을 위한 교육 복지 필요합니다
이충현	다자녀 혜택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학비(대학,교육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줘야 예비 및 독자녀가진분들의 출산장려가 되지 않을까요?
김윤우	아동결핍지수 제로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연호	우리 사회에서 약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비하를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된 약자들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김지선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애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김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대표자 겸 가산 사회복지사는 왜 연차를 적용해 주지 않는가?
박상진	사회 구성원을 위한 기초 안전망은 무엇입니까?
조태희	저는 언제쯤 자동차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정덕현	수급제도 개선좀 해 주세요
박미주	이 나라는 왜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은 없습니까?
전옥철	어린이 보호구역 30Km/h 제한, 등하교 시간이 아니라면 해제할 수 없을까요?
문은주	정부 경영 노인홈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민영	우리의 노후는 왜 자영업자와 예비 자영업자로 나뉠 수밖에 없나요?
전상훈	왜 한국에서는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고아 수출이 최고 수준인가요?
이동희	아이 키우며 가장 지출이 많은 학원비는 왜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박인도	40대중반 새로운 경제활동에는 어떤것들이있을까?
김윤미	마처 세대...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창우	기본소득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영수	아이가 없는 노인인 제가 치매 등으로 올바른 판단을 못 하게 되면 제 재산을 관리해 줄 공적인 기관이 있나요?
이지현	한부모 가정은 소득이 높아지면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영신	양육비 미지급을 받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김근섭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단속방식의 변경: 지점 단속에서 구간 단속으로.
박계순	지하철 운행 적자가 왜 노인 무임승차 때문일까요?
최경희	요양원이 점점 더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경미	목숨 걸고 일하시는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이형근	노후 준비 어떻게 하나요?
지현진	세금을 올려서 내더라도 대폭적 보편적 기본적 복지를 받고싶어요.
김태희	왜 최하위 계층에게 효과 있는 직접적인 복지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나요?
최운혁	앞으로장애인정책은 어떻게바뀔지궁금합니다^^
이상영	늙어서 노후를 비참하게 보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수빈	장애인 복지가 아니라 인권존중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재원	3050대에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좋은 제도를 누리지 못할까요?
정선욱	탈시설화 장애정책 속에서 부모 사망 후 발달장애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가야하나요?
정재일	인구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간접 인프라 투자 확대는 관리가능한가요
채수미	반려동물을 왜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유기하는 걸까요?
조경호	퇴직연금401K 퇴직후 노인빈곤 퇴치를 위한 방법없을까
김건우	어떻게 하면 발달장애인도 우리와 함께 동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록희	여성들은 언제 성적 대상이 아닌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을까?
최병욱	농지법개정이 왜 안되는 것인지요?

김영호	왜 동두천에는 주한미군보다 아프라카 불법체류자가 더 많은건가요?
김서유	지자체에서 길고양이를 관리하면 안 될까요?
진영수	거동이 불편하신 엄마와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걸까요?
이정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가족이 하면 서비스 시간이 50%만 인정되는 것은 타당한가 ?
김성대	지체 장애인의 이동권, 노후대비 등의 자립 환경은 21세기까지는 가능할까요? 인류 멸망이 먼저일까요?
문경림	1인가구를 위한 복지는 없나요?
강미정	어린이의 이름이 법이 되는 일, 왜 반복될까?
김형근	외국인 밀집지역 방지를 강제할 수 있는가?
이성욱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할 수 없나요?
강성권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이용아동의 장애영역 확대해주세요
최재훈	OECD 국가 중 가장 불행한 한국 아동이 마음껏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놀이하며 성장하기 위해서 개인, 가정, 지역사회, 정부기구, 비정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도깨비-t3i	보육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mjshin1162	왜 약자들은 당하고만 살까?
jheartu7036	왜 한국의 장애인들은 외출하기가 힘들까요?
오현석	이동약자의 이동 편의에 질문을 합니다.
이시스-s5h	돈을 모아두지 않아도 되는 사회는 불가능한가?
jks981	왜 50대는 부모부양과 자식부양 둘 다 책임지는데 국가 혜택은 항상 뒷전인가?
안세민	진로 탐색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manwali	고령화시대, 고급/고령 인력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희영-g6h	50~60대 시니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reginalee8175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을 위해 자격심사를 할 경우 꼭 심각한 치매 환자인양 연기를 해야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세상에-i3u	농민도 국민인데 좀 잘사면 안되니껴?
김세리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손해 보는 거 같을까요?
이건구	지자체의 생계형 소액 대출 보증에 대한 질문..
오연서	사회적 약자에게만 휘두르는 분노조절장애자들의 묻지마 폭력,살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신화정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이상이지만 제대로 된 동물 보호법은 왜 없는 걸까요?
이희선	대중교통, 공공 및 상업 시설이 육아 친화적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선희	길에서 폐지를 줍는 분들을 왜 국가는 보고만 있나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권하얀	E2 비자 외국인 강사 세금 매년 사라진다.
이현숙	선천성 질병으로 구직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박성남	내국인과 외국인의 급여 차이가 적은 것은 과연 합리적일까? 그리고 외국인은 국내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호정	장애인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만 하나요?
양덕방	저는 장애인 엄마입니다. 제 아이도 장애인입니다. 내가 죽으면 제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정영순	생리대 지원을 무상 급식처럼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할 수는 없을까요?
이혜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이경원	왜 굶주리는 아이가 계속 있나요?
이태웅	육아 관련 신규 정책, 꼭 00년 1월 1일 이후 적용으로 날짜 적용해야 할까요?
김덕훈	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하지 않는 정책을 펴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나요?
전찬경	어린이집 유치원을 회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김동주	중년인데 10년 후 60세면 정년입니다. 공식적으로 정년 나이를 더 늦출 수는 없을까요?
김지은	민주당에게 여성은 무엇입니까?
최영주	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원, 어르신,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모두 만족하고 행복한 곳이 될 수는 없을까?
전혜정	어르신들을 위한 택배 서비스 쿠폰이 필요합니다.
정덕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임윤정	발달장애인은 꼭 거주시설에 살아야 할까요?
김성민	보호대상아동(보육원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상처받지 않은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형남	3자녀는 어디에서 숙박을 해야 하나요?
김진희	아동복지 - 시골 도서관을 어린이테마카페로 만들자!
김진희	아동복지 - 직업으로서의 엄마, 가능할까?
홍수정	공산품 중 유일한 면제품, 생리대. 왜 이렇게 비싼가요?
윤성우	40~50대 세대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준서	4050은 투명인간 인가?
김세진	대한민국은 4050세라고 하면?
김형근	외국인 사회통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까?
김희옥	정년 이후 노령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허윤정	아동 학대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원스톱으로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정회수	모든 장애인에게 소득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이 급여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현주	기초 수급 신청 과정을 간소화해 주세요.
김진아	열심히 살수록 더 억울해져요
윤세희	유기동물 문제, 왜 우리는 유럽처럼 해결하지 못할까?
박선영	희귀질환자 지원 범위에 부양의무자 삭제해주세요
진보라	한국도 아이들의 안전 등하교를 위한 스쿨버스 도입해주세요.
윤명희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사회로 가는 묘책을 찾아 주세요.
홍지수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소방관들에게 면책 특권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동회	전국민 복지 바우처 정책을 시행합시다.
오연주	이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도 고려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현정	아침 급식+방학급식 시행하고, 담임교사를 오전/오후 2담임 체제, 거점학교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
이영호	청년 세대는 외국인과 임금 체계 ,일반적 사회복지 혜택등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조윤서	한국에선 집회의 자유를 위해 동성애는 범죄자가 되도 되는건가요?

배혜정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4050을 돌아봐주십시오.
김근섭	노인 요양 급여를 제공하듯이, 장애인 활동 보조를 수행하는 부모를 위한 급여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배혜정	복지 기준, 소득만이 아닌 재산과 소득 등 모든 것을 포함한 실제 경제력을 통해 책정해야 합니다.
김광희	마트나 공공 시설의 주차장 장애인 구역을 30%만 줄이는 건 어떨까요?
이정훈	촉법소년제도는 다시 손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지영	40~50대를 위한 청년 도약 계좌 같은 지원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김욱진	소외 받는 40대 50대를 위한 정책 필요합니다. 우린 목숨 걸고 뛰고 있습니다.
김진태	기초 생활 연금 지급 기준을 월 수입 200만 원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경례	농인이 손과 팔에 산재 사고시 한국수어 언어권을 인정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요청 합니다.
박준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대를 뒤바꾸는 대담한 초석: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제안
김애영	한국은 언제까지 여성 대상 범죄를 혐오범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김의찬	맞벌이하면서도 내 새끼는 내가 키울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안병출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을 여러 번 받았다는 이유로 다중 채무자가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김병철	개 식용 방지법의 향후 사회적 비용 대책은?
류이현	여성 의복 프리사이즈(F)는 왜 평균신체 사이즈인 M보다 작은 걸까요?
정가을	노후가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노후에도 일하고 싶습니다.
이상률	아픈 노인이 된 대한민국, 좋은 처방은 무엇일까요?
윤희정	성인 장애인이나 발달 지연자들을 위한 교육 기관과 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이종성	장애인 등급 심사 개정 필요합니다
주성호	장애인복지 예산은 왜 저 예산인가?
박소정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은 충분한가?
신영진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와 최저생계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오춘분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위한 24시간 돌봄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가정을 위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노희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양한 위치에 있는 한 개인(저)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 공유하고 이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휘	다자녀의 기준을 왜 만 19세까지만 규정 짓나요?
김민정	기초수급자들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들어주시나요?
김효라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
주성호	한국의 장애인복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해결할수 있는가?
김정애	둘째 아들이 7년째 방콕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성훈	개인회생 신청자 중 절반은 중도에 포기합니다. 제도를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박민수	독거노인의 사망 이후, 절차 진행이 궁금합니다.
윤성원	고령자와 장애인, 누구나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장혜진	왜 취학 전 아동까지만 양육수당을 줄까요?
김애영	장례식장 바가지 규제가 필요합니다!
김병현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동회	민주당은 왜 이번 온누리상품권 사태에 침묵하는지요?
황미심	다시 살고 싶은데 정책이 손을 뿌리치네요.
황지영	50대를 위한 정책을 알려주세요
조원향	치매지원센터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이하니	저소득층이나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서류는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기재하는 이야기책 형식으로 바뀌여야 하지 않을까요?.
김두봉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선진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
최재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아이들 양육 비용의 사회적 부담(이전소득)과 근로소득세 개선에 방법에 대한 질문.
황상연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연령이 9~24세가 현재 우리 사회에 적절한가?
정영옥	3월8일 여성의날 여성의삶의정치는? 가장한국적인예도와미가있으면서가장현대적인사고와문화를동시에소유한것은?
김귀성	현재 대한민국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리아	농민 농촌 기본소득 보장은 언제쯤 실현될까요?
이하니	동사무소나 시청에 복지신청룸을 의무와 합시다.
남승욱	왜 지하철만 고령자 무료 탑승이 가능한가요?
방가영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착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천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정도는 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서진솔	유기견 보호소를 수익성 있는 강아지카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윤연정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만 있을 뿐일까요?
박광곤	국립중앙박물관 모유수유실 커튼을 달아주세요
하안나	차상위계층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안상학	우리 노후를 국가는 시대에 맞게 얼마나 준비해주는가?
정미진	청년도약계좌 좋은 정책인것 같습니다. 자리잡지 못한 중년층을 위한 정책 지원도 만들어 주세요.
도완영	TV에서 힘든 사연이 나오고 후원 요청 프로그램이 나올때마다 화가 납니다. 도대체 국회와 정부는 뭐하고 있나요?
조희진	한국여성의 이슈는 여성들이 해결해야 하나요?
박지헌	4대보험 없는 일반인도 대환 대출이 가능해지면 좋겠습니다.
김태희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서 혜택을 받으라는 행정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아닐까요?
마성영	대한민국 모든 보도블럭이 훨체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정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미주	여자 혼자서 산책할 수 있는 나라가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유엽수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 준다면 기꺼이 세금 인상 받아들일 수 있다.
장재용	장애인등록자동차 2000cc이하 불합리 합니다.
나동수	편의점 이용을 위한 슬로프 설치를 제안합니다.
유찬웅	3자녀 출생율을 높이려면 3자녀 이상이면 집 한채 주는 정책은 어때요? 애국자들이잖아요
양석원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쉼'을 위해서 시간을 선물해 줄 수 없을까?
박대희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규정	정치권에서는 노인빈곤을 해결할 의지가 있나요?

이미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원센터가 전문적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민경	노인가족요양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분	장애인활동보조사 수수료로 회사에서 25프로이상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큰 문제 아닌가요?
ranger-ioi	기본소득 얼마면 좋을까
양지완	아동 스마트폰 소지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박정현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방가영	다른 유럽 선진국처럼 지금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충분히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걸까요?
김진희	고립인가요, 고독인가요? '거기서 나오세요.' 말고, '거기서도 괜찮으신가요?'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김진희	노인을 위한 스마트돌봄,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박건형	여러가지 제안 및 재정 확보 시스템으로 기본소득 사회 만들기
김경훈	도시를 떠나지 않고, 못하는 60대 이상 노년층을 위해 도시의 새로운 기능, 방향성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정란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교사대 아동 비율에 따라 수입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함인호	대한민국의 발달 장애인들은 자립 할 수 있는가?

복지제도

박상현	왜 국민연금 지급보장은 명문화 되지 않나요?
최낙진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들 합니다.
권애진	연금계좌는 서민들의 노후 대비 자금입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김준영	세금을 미리 내는것으로 대한민국에 투자 하고 복지나 세금 할인으로 돌려 받고 싶습니다. 안될까요?
CHARLIE YI	나는(우리들은) 사회적 비용(선진국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있나?
이지영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갈 나라가 될까요?
안정섭	국민이면 누구나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길	왜 재산은 상속되어야 하는가?
김성곤	가입 되어 있는 보험은 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가?
최현주	국가유공자에 대한 폭넓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
송석길	왜 기재부는 복지 예산은 편성해주지 않을까요?
임도영	국민의 의무인 세금과 복지를 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노인요양 보험,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고 단순한 원칙으로 국민이 살아 가기 편리했으면 합니다.
강재욱	언제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노영주	왜 종교 단체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할까?
조석용	매년 멀정한 보도블럭은 왜 자꾸 교체를 하는 걸까요?
박승인	종교단체라는 법인들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는 걸까?
배재환	기초 수급 대상자인 노인들이 노령 연금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이 합당한가요?
백기천	국민연금 기금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최익수	국민연금을 최대 수익률이 나오도록 운영해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강대성	지자체 예산 낭비 방지 제도를 다양하게 마련해 주세요.
이홍수	농축산물 이력제처럼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할 수는 없을까?
이종호	소상공인 지원이 비효율적이라 엄청난 낭비라 생각되는데 현실적인 집행 방법은 없을지?
김지성	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너무 넓어요
노청호	왜 군인 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야 하나?
노청호	왜 세금 누수가 많나?
황명복	내가 내는 세금은 어디로 가나요?
홍창효	국민연금은 대국민 사기극인가?
신민순	우리나라는 무슨 협회들이 그리 많나요?
홍영보	왜 세금 낼 때는 청구하는 쪽에서 요청하면 안 되나요?
안기준	국가 기관은 왜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물품을 구매하고 계약을 진행하나요?
장승호	정년 연장 또는 국민연금 수령 기간 조정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박정연	국가 시스템이 초고령사회에 맞춰 건강하게 전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윤규	매국노, 친일파도 묻히는 국립묘지에 국가유공자이신 아버님은 왜 모시지를 못하나요?
최정환	인구 감소에 따른 자원 재분배는 왜 이렇게 느릴까요?
남궁옥	국방, 소방, 병원 같은 나라의 기본이 되는 곳에는 장비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나요?
최정환	언제까지 축제 공화국이 될 것인가요?
박성진	복지정책에 의한 지원금은 왜 복잡하고 제각각일까요? 아동복지지원금도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이찬호	국세 체납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지요?
김수경	왜 교회만 세금을 안 내는지 궁금합니다.
오세윤	국민 1인 1통장을 만들어 주세요
김종욱	국민연금 고갈 걱정하면서 국가의 수익모델에 국민연금 기금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서창현	세금낭비....멀쩡한 보도블럭은 왜 뒤집어 엎나?
김동관	본인이 낸 연금을 왜 65세 이후부터 받아야 하나요?
조윤서	왜 종교인 특히 개신교 목사들은 세금을 내지 않나요?
이상민	국민연금 믿을수 있나?
박주경	국가는 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할까?
나성균	복지는 왜 신청주의인가요?
윤혜경	우리는 왜 공공 기록을 남기지 않을까요?
황인용	고액 자녀 증여 또는 고액 상속은 ^연좌제^에 속하지 않나요?
김종필	일을 꼭 해야 먹고 살수 있나요?
최경호	용적률 인센티브와 같이 손 안대고 코푸는 방식은 언제까지 통할까요?
이혜선	근로와 자산에 대한 세금 형평성 등 사회대타협을 해야 합니다
윤송희	연말만 되면 소비되는 혈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김충실	정부예산을 일정부분 국회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채택하면 기획재정부와 함께

조재민	악성 민원인의 사적보복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신문고 익명 민원신고 이대로 두어도 될까요?
최진영	공공기관 입찰 시스템, 정말 지금이 최선인가요?
박문수	부동산으로 집중된 대한민국의 부 - 2025년 .2월 현재까지 현 민주당, 국힘 관계없이 / 교육에 대한 제안 / 평등에 대한 제안 /기본소득
박용진	종교인은 왜 과세를 안 하나요?
장경수	종교와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동규	국민연금 납부는 개인의 선택 사항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서유	상반되는 의견, 원하는 대로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신재민	오랫동안 납입한 보험입니다. 왜 정부가 나서서 초기1세대, 2세대를 재매입한다고 할까요?
최윤식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뒷받침해 줄 수는 없을까요?
김희진	국가 장학금 신청 시 왜 자가 집은 고려하지 않나요?
심금관	종교단체는 왜 사업후 잉여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가? 여기도 법인이다.
정도현	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죠?
장은화	아침에 폭설이 오는데 과연 출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김선일	과세와 복지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금 정책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김동곤	19세 이하의 국민에게도 연금을 주면 안 됩니까?
지재용	왜 공공기관들은 당해 연도 예산을 무리해서 소모해야 하나요?
김영준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 왔어요. 이제 문자 좀 그만 보내시면 안 돼요?
김미자	힘든 시기에 국민연금을 강제 불입하기가 참 어려운데, 국민연금 제도는 꼭 필요한 것일까요?
김대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모든 사회 문제들(저출산, 자살률 등)이 돈 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용	현실에 맞지 않는 과세기준 환원해주세요.
이기순	국민연금 수혜자로써 생계자금 연금대출을 받고 싶은 데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대삼	연금이 4개 분야로 나뉘어 있어 수급의 불평등, 고갈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숙빈	기본 소득에 대한 설계를 해야 할 때 입니다.
김영일	현재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얼마이고, 고갈되지 않게 하려면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박기연	부의 재분배를 위한 세금제도 바꿔 봐야 하지 않나요?
임도영	국민연금을 70년대생 80년대생 이런식으로 세대별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최소로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것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 등을
	활용하도록 합시다
shinhyunmin6937	국민연금은 왜 미국처럼 운영사를 마음대로 못 정하나요?
이명재	정부상징 마크에 태극문양 변형된것 바꿔주세요
hyunkim1920	연금, 살릴 수 있을까요?
이건석	한국판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부서는 탄생할 수 없나요?
나선영	인재로 인한 단전, 단수 시에는 왜 피해 보상이 안 되나요?
박상규	주식, 코인 등의 투자처가 늘어난 만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장필선	징벌적 상속세로 인해 왜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가?
최윤석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임유현	싱가포르처럼 국민연금을 내가 낸 만큼만 받아가는건 안될까?
임영규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
김수연	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예: 컴퓨터, 태블릿)은 비싸게 조달청을 통해 사야 합니까?
김정훈	민주당에서는 기본소득을 허황된 꿈으로만 만드실건가여? 이재명과 같은 미래를 상상하며 정책을 보완해주는 분은 없으신가요?
황대용	기본 소득보다 기본 소비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봉철	납부된 국민연금 중 일정 금액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바랍니다.
정인규	유튜버들에 대한 정밀한 세금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명근	국민 도민 시민 군민 몰라서 못 받는 각종 혜택을 강제로 받게 할수 없을까요?
도용호	왜 국세청은 종교계에 세금을 거두지 않나요?
박영준	왜 세금을 내가 머리 아파 가며 내야 하나요?
윤정희	소득 분위는 합리적인 기준인가?
김성수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세 구간을 함께 확대해야 합니다.
이동회	수도권 및 광역시와 농어촌간 공공요금을 차등화하여 농어촌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세요.
이동회	역대 공약 중에 소득세 낮춰주겠다는 공약은 왜 한 번도 없었나요?
최성호	국민연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넣었는데, 더 내고 더 적게 받으라고요?
신은희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주민 센터가 안내를 제공해 주세요.
윤재호	일하지 않는 국민도 정부가 부양해야 하는가?
김종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 영어를 제2 공용어로 채택하면 어떨까?
김세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김대희	자녀가 적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상속세 제도를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본철	상속세 기본 공제 금액이 최소 10억은 되어야 합니다.
김중현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에 지원되는 세금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안 되나요?
용상구	정년 연장이 과연 연금 고갈에 대안이 될까요?
이인구	왜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바꾸는 공사를 하나요?
김윤호	보도블럭 교체 등 지자체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는 없을까요? 지역화폐 활성화
임강빈	세금의 10~40%씩을 남겨 미래세대를 위해 씁시다.
김동한	종교인 과세 이번엔 성공해야 합니다.
김철산	연말정산 시 주택 구매 이자 차입금의 주택 기준이 변경되어도 소급 적용 안 시켜주는 이유가 뭔가요?
박종환	종교에 세금을 물려라
강대삼	종교단체의 비과세 정책은 반드시 폐지 해야 합니다.
하태환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해야 함 (저는 53세)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정순연	기초연금 제도 이대로 좋은가요?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없나요?
강대삼	연금 징수율을 높일 것이 아니라 지급률에 맞게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서한섭	1년마다 징수하는 자동차세는 합당한가?

이윤수	세금을 인상해 사회 복지와 미래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박창영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나 현금을 주지 못할까요?
김명규	유료 도로 등에 대한 투자를 국민연금으로 한다면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을까요?
최만석	지방 의회가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져야겠습니다.
손은실	공인중개사가 계약 후 문제까지 책임지게 한다면 부동산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김세진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게 왜 없나요?
박세용	전국의 코스트코에서 10원 동전을 사용해 제작 비용 부담이 생길 텐데, 정부에서 규제할 수 없나요?
하태환	국민연금 - 30년 후 소진되는 펀드에 누가 돈을 넣고 싶어하겠는가?
주광영	왜 정년퇴임 이후 바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윤성원	최악의 공공서비스에 상을 주면 어떨까요?
윤성원	공공디자인 품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준영	국민연금 개혁에서 정부는 무엇을 책임지고 어떻게 얼마를 부담하나요?
김민정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없나요?
김성근	이재명의 지역화폐기본소득을 실시하면 위험과 가난에 처한 태아와 임산부와 미혼모에게 지역화폐기본소득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건	장애인 연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요.
윤성원	왜 정부는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고 할까요? 정부 역할의 책임 회피 아닌가요?
신동숙	국민연금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면 어떨까요?
유상봉	국립공원에 입산금지가 너무 많은것 아닌가?
하태환	국민연금 적립금을 5000조 원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당장 내년부터라도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양희진	입학준비금이 입지도 않는 교복으로.. 세금 낭비 아닐까요?
윤준식	복지와 투자가 같은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채승묵	정부의 지원책은 왜 현금 지원이 아닌 면세, 감세인가요?
김회근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을 위한 강력한 복지 정책이 왜 없을까요?
김승아	국민연금에 대하여 상의드리고 싶어요.
정미진	지원금이나 개개인에게 맞는 정책들을 자동으로 알려줄수는 없을까요?
박희각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는 말이 안 됩니다.
하태환	국민연금 적립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정부 안이 민주당 안보다 마음에 듭니다.
정영옥	국가공모전 참여후 탈락허탈감 보상제도는 없을까요?
최동욱	나라장터나 학교장터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
박찬식	종교인들과 종교시설에 대한 과세 정말 문제 없나요?
남형수	개인의 노후를 국가가 보장해 줄 수는 없나요?
이상진	농촌 지역에 난방비 보조를 해 줬으면 합니다.
강영은	직종에 종교인 항목은 대부분 왜 없을까요?
이혜은	종교인 과세를 계획하고 있나요?
김명진	복지제도에 있어서 개인별 생애주기와 경제수준에 따라 신청이 아니라 자동안내 및 지원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나요?
지완진	2025년 한국산업인력공단_모든 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화장실 출입 금지 개선 건의
정윤범	연금개혁, 왜 미래세대만 희생해야 하는가?
서진희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왜 어떤 농촌마을들은 마을기금을 내야 이전할 수 있나요?
이종복	박찬대 의원님이 발의한 법 때문에 연금계좌에 들어는 배당금에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 알고 싶어요
홍성원	소비소득. 소비만 해도 소득이 만들어지는 사회! 생계 노동에서 해방?
김지형	울산 동구 낚시 조례안에 대해
홍성원	소비소득 2탄. 기본소득과 소비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한다면?
김기훈	경작 중인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또는 비과세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표	강제 징수되는 국민연금, 조세가 아니라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선 사실상 조세다. 국민투표 즉시 실시하라!
김미자	국민연금폐지 국민들 공론화 의견 들어주세요.
유찬웅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왜 거부하셨나요?
윤경순	세금 거부 운동하면 어떨까요?
홍성원	소비소득 3탄(최종). 적용 가능한 사례들을 말씀드립니다.
장하주	종교인들은 국민의 제1의무 납세의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온갖혜택은 다받고 있나요?.
정연주	탑골공원을 국가적 성역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윤성원	왜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평가하지 않을까요? - 만족도 조사로는 경험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임성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합시다.
위수임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면 왜 최저임금도 못 벌어야 하나요?우리는 언제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성준	국영으로 행해지는 마약, 도박사업을 중단해 주세요
유진원	임대차법은 누구의 권리를 축소하는가?
조성우	똑같은 시계를 왜 일본보다 100만 원 더 비싸게 사야하나요? (30년 전 만들어진 사치품에 대한 세금)
곽현진	국민연금은 부부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과 본인연금과 둘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부분은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경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국민연금으로 해결해보면 어떨까요?!
이정희	*소방서.경찰서.파출서 일원화*보건복지부의 예산 기준점의 변화도모
김세진	지자체나 정부에서 진짜로 예산이 없는건지 있는데도 회피용 인건지 국민들이 알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양지완	복권 당첨에 대한 세금이 과합니다.
김명재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직원들 차량이 우선인가요?
이원홍	민영화를 멈추고 국유화로 돌아가야 합니다.
최미희	강제급식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을까?
윤성원	왜 정부의 공공 정보는 이해하기 어렵나요? (공공서비스 데이터 시각화)
장정희	국민연금의 이중잣대,법의 사각지대 아닐까요?
하현옥	최저 시급은 해마다 오르는데 연말 정산 배우자 공제에 해당하는 근로 소득은 아직도 변함없이 똑같은 금액 500 만원 일까요?
김용만	국민연금 수령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다고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것은 현 사회경제적 현황에서 불합리 하니 법을 개정해야하지 않나요?

사회 양극화

김서유	종교단체의 정치 활동 금지, 세금 부과에 대한 법을 만들 수 없을까요?
노덕신	종교가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선동하고 있어요.
노덕신	개신교 의 자정능력과 유사종교를 퇴출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세원	이미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배타적인 집단지성은 에코챔버를 극복할 수 있는가?
김세련	이번 대선국면 시작전, 차금법에 대해 민주당의 스텐스를 정확히 하여, 개신교(뒷배국힘보수극우정치세력)가 민주당을 악마화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면 안될까요?
김세련	정치 목사들(극단적 성향을 띠고, 폭력과 혐오를 조장하며 뉴라이트를 지지하고, 역사를 왜곡(이승만우상화,5.18폄훼) 및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치쪽에도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에 대해 해결책이 있을까요?
백경재	왜 많은 남성들은 군대문화와 회사문화를 동일시할까요?
고동휘	부산은 왜 보수화가 바뀌지않을까요?
오정석	서양기독교는 헤브라이즘 종교인가?
김사현	왜 20, 30남자들의 정치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칠까요?
최정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사이비 기독교 목사들을 어떻게 처벌할 건가요?
정의필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사회적 계층은 더 평등해질까, 아니면 더 분열될까?
강영은	수저론을 이제는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차기수	사이비 종교는 국가정책으로 막을 수 없나요?
최송민	세금은 왜 중산층에게 가혹한가요?
신유철	어떻게 해야 점점 극우화되고 있는 2030 남성들이 현실을 직시할까요?
박보람	20대 남성들 왜 보수화 되고 있나?
임준영	왜 돈 많은 사람은 큰소리 치고 무례해도 모든 게 용서가 되나요.
김영호	종교를 사칭한 사이비 사기 범죄집단에 대한 종교사칭 금지법을 왜 못 만드나요?
김병석	대한민국 북서쪽 끝에 있는 인천공항 하나만 있어야 합니까?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동남쪽에 국제공항이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김주원	사이비 종교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이승현	극우화되는 젊은 남성들을 토론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사회적인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창훈	극우세력은 세계적 추세(트랜드)인가? 대한민국 극우세력은 종교(특히, 기독교)+ 누구인가?
박영원	현실을 알지 못하고 생각이 굳어져 혐오스런 존재가 돼 버린 노인들의 생각을 돌릴 방법이 없을까요?
윤병철	우리가 허용하는 자유가 너무 과도한것 아닌가요
홍영준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가?
이유승	왜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침묵했나요?
조학선	인간은 왜 돈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걸까 ?
조선익	빈부격차가 완화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심화되는 이유는 뭘까요?
한기형	2030 젊은이들은 왜 공정과 상식을 버렸는가?
박영진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은영	페미운동으로 인한 역차별 받고있다 생각하고 있는 2.30대 남성들을 위한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차병학	우리 사회에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그리고 자본주의자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김철회	우리사회는 전체주의 의식을 어떻게 극복할수 있을까?
정미영	우리는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없나요? 팽배한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박민수	왜 2030남성들은 극우화 되고 있는가?
윤지석	한국의 종교단체들, 세금을 걷어야 하지 않을까요?
문동주	노력한 사람이 성공합니까? 성공한 사람을 노력했다고 거꾸로 끼워맞추는 것입니까?
김제성	이단, 무속, 사이비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격리 시킬 수 있겠는가?
김영호	왜 돈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못하나요?
최영아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1가구 2주택 이상은 적폐인가요?
마상욱	가부장제의 잔재들을 철폐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현수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은 돈이 계급이고, 돈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홍성민	한국의 기독교는 왜 사회정의에 눈 감는가?
정국	강남에 사는 나와 서귀포 안덕면에 사는 나는 왜 우리 공동체로부터 받는 혜택의 차이를 줄일 수 없는가?
기노섭	20~30대 남자들은 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김영섭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 되었고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민주당은 어떤 계획과 비전이 있는가?
김형근	사회통합: 과연 모두의 질문Q는 보수우파의 질문도 빠짐없이 수집할 수 있을까?
도완영	이대로 5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10년 후 농촌에 사람이 없어질겁니다. 골든 타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광환	2030대 젊은 남성의 보수화? 왜 일까?
송의진	집 없는 사람들이 왜 종부세 부과에 반대할까요? 저소득층이 왜 보수당을 지지하는 걸까요?
나상호	출산/보육관련 정책이나 혜택이 왜 지역/지자체 마다 다르게 시행하나요?
임성예	어려운 사람들의 가계대출이 늘어날수록 은행은 돈잔치를 하는 현실이 맞을까요?
김건우	우리 사회는 어쩌다가 국민의 힘 같은 눈앞의 이득만 쫓는 극우정당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종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해소 해 나갈 수 있을까요?
김은영	사이비 종교는 왜 이렇게 뻔뻔스러울까요?
정민우	왜 아무도 기독교가 거짓말이라고 말을 못하나요?
민동우	젠더 갈등의 가장 큰 촉매제인 병역 문제는 이제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은아	군대를 다녀온 20대 남성의 여성혐오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양영신	20대들은 왜 극우가 되는가?
배지숙	시골에 있는 우리 엄마도 유명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카페에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미아	청소년(남)들은 왜 극우화 되어가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김윤기	보수 노인들은 왜 문재인, 이재명을 그렇게 싫어하는가?
최보현	경상도 사람은 왜 권력을 추구하는데 병적인가요?
김일환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국가에서 상속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찬규	폭력적이고 극우화된 개신교 세력의 발생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김다슬	대한민국 2030남성들의 극우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김영호	왜 동두촌, 연천은 몇십년동안 열차의 증차를 의도적으로 안 해서 지역주민이 경제적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이현충	사회에 악한 영향을 주는 종교 단체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신은이	성별갈등이 세대갈등, 지역갈등보다 심각한 문제 아닌가?
백동오	70~80년대, 폭력적인 시대에 성장한 우리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조용범	법인 종교단체의 기부금 모금에 대한 규제
고다원	AI와 로봇생산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부자들만 배불리지 않게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shadow1313a	청년/중장년/노년 '세대갈등' 풀어나갈 방법은?
FrankshKim	소득의 재분배가 제대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
민보규	20대 남성들의 불만은 왜 이렇게 공론화가 안될까요?
박세종	한국 주류 개신교가 걷고 있는 길이 국가와 사회 시민에 끼치는 영향이 옳은가?
김돈진	일가족 19명 사망(몰살당한) 한 우리 조상님들을 포함한 적대세력(인민군, 빨치산)에 의한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배보상은 0원인 반면,
	군 · 경에의한 피해자들(빨치산 포함)은 1억원 전후의 차별된 배보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가 할 짓인가에 대해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진화위 관련(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 위원회)
이나영	전라도 투자와 발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건가요?
홍진우	과연 현재의 자산은 평등하며 기회와 경쟁은 공정한가요?
조기식	조직화 대형화 의식화되어 가는 사이비종교가 사회의 암적존재로 성장하고 있는 문제
박광일	공공대출권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상규	종교계 납세의 의무를 하고 있는가?
이종국	공산주의 사회주의하면 안되나?
정창규	소득 분위를 없애고 기본 소득을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
이병철	사이비 종교(종교라고 칭하는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됨)를 제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SHANE HORNSBY	사회적 계층의 이동이 가능한 사회는 오는 가?
이대송	2030 남자 이렇게 그냥 가야 하는지요. 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대책은 없는지요
김정한	지방소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제안합니다.
윤연정	우리와 같은 선진국 대열 국가에도 한국과 비슷한 달동네와 지하단칸방이 있나요?
이대송	66~69년생을 위한 정년 연장, 연금 제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박승원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메랑 코인으로 지역 화폐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임현아	지역 아동 센터의 교육과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했으면 합니다.
도완영	종교도 세금 받아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내고 나서 환급받거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홍가람	민주당의 남성 혹은 남성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heeyoungpark7261	지방에는 젊은 이들이 살고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 할 수 없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야하고... 큰 철학도 없는 엄마는 아이 키우기가 참으로
	버겁습니다. 방법은 있는 것일까요?
정주나	왜 우리는 페미를 사상 검증하는 잣대처럼 쓰는 걸까요?
손혜경	시골은 왜 안전하게 걸어다닐 인도가 적어야 할까요?
오성기	젊은이들이 군대나 종교 단체에서 집단적 세뇌에 의해 극우화되는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하재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존경받고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 수 없을까요?
송혜숙	왜 같은 종교를 믿는데도 극과 극으로 나뉘어서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상기	건전한 종교 활동을 위한 종교부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동환	모든 구성원이 주주인 플랫폼 회사를 만들어 민간 부문에서도 기본 소득을 제공하면 어떨가요?
전경옥	사이비 종교를 퇴치 혹은 금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민정	죽을 때 돈 싸가지고 갈것도 아닌데 인간의 욕심은 왜 끝도 없을까요?
고대경	20대 남성은 왜 보수화하고 있는가
김진태	하나님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불법적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전 재산 몰수해야 하지 않나요?
박규삼	AI시대 - 양극화를 좁히는 방법은 없는가? 인간이 더 존엄해질 수 있을까?
김병기	금번 산불화재가 마무리되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지도자님들을 만나셔서 거짓무속, 사이비 종교 등의 폭력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하시고 협조를
	구해야하지 않을까요?
이정기	택시 승차난과 기사들에게는 적은 수입이라는 문제가 동시 있습니다. 경기도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하지 않을까요?
함인호	노인들과 청년들은 왜 극우가 되기 쉬운가?
김세진	신천지 및 사이비,이단 종교 단체는 없앨 순 없나요?

사회신뢰

주성호	세계에서 가장 왜 갈등 지수가 1위가 되었는가?
이혜수	소시오패스가 아닌 사람들이 불이익당하지 않는 사회는 언제쯤인가요?
김규리	왜 대한민국은 특정 나이를 넘으면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거나 꿈을 좇는 것이 어렵게 여겨질까요?
황준연	지각은 왜? 주민국민 우리만 처벌받아요?
김태풍	우리사회는 용서가 왜 이리 쉬울까요?
모강우	왜 우리사회는 유청소년기의 성적 계급장으로 한 개인의 사회적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만 하나요??
맹공열	열심히 살았는데 난 왜 가난할까요?
황아현	제 자신부터 혐오에 오염되었어요, 혐오가 만연한 사회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요?
이미경	복지 혜택은 왜 편법을 쓰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걸까요?
정다은	우리사회에 부정부패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일진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어떠한 법 체계가 필요 할까요?
김영호	왜 의사협회, 변호사협회에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나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이금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
마은성	엘리트 라는 집단이 문제를 만들고 왜 항상 그 문제를 국민이 뒷처리를 해야 하나요?
변봉규	우리나라 엘리트라 불리는 사람들은 왜 이기적일까?
김영호	로또복권 추첨에 대한 전국민이 느끼기에 투명하다고 생각되게 투명한 관리는 왜 안 될까요?
안자호	고립된 개인이 조직된 다수의 횡포에 잠식되지 않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성국	우리 사회는 고질적인 직업불평등을 해소할수 있을까
최소정	아이들은 언제까지 경쟁사회에 내몰려야하는지?
김선백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입니까?
김지선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사는데 왜 가난한가?

황상욱	우리 사회는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달릴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김채언	대한민국에서 「불공정」보다 『법과 원칙』을 우선하는 조직·사회 분위기가 될 수 있을까요?
현경산	왜 회사에서 직장 상사는 이렇게 권위적일까? 과연 인간 평등은 있는 것일까? 직장에서의 민주화도 필요한데 우리의 사회문화는 아직도
	권위주의에 갖혀 있습니다.
정용호	대한민국에서는 왜 - 열심히 살면 잘산다- 라는 당연한 명제가 성립되지 않는가?
지은영	부의 세습과 권력의 세습, 당연한 일인가요? 기본 소득 보장과 공정한 사회를 향하여
이송범	왜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주현상	왜 우리 사회에서는 건강한 토론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정용상	멋진 수트에 넥타이를 매고 인간의 언어를 쓰는 엘리트 침팬지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으로 부터 격리시킬수 있을까?
차기수	혐오 표현은 법으로 금지할 수 없나요?
정유미	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권한과 권리만 누리고 책임지지 않는 걸까요?
오승한	공익제보자가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상해야 합니다.
최민준	대학을 학과별로 나누어 각 지역에 분산하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수진	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있을까요?
성다야	우리 사회에서는 왜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더 손해를 보는걸까?
권택환	사회 전반에서의 불평등 갑을 관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변문순	우리 사회의 높은 부패 지수를 해결할 방안이 무엇일까요?
김사원	개인화는 능력주의로 이어지고, 양극화라는 큰 폐해를 낳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남기효	학벌 위주에 사회현상은 없어지질 않을까요?
김형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힘이 왜 우리를 위해 행사되지 않는가?
김동현	로또 조작 이슈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김대천	의료 서비스, 양극화, 법 앞의 평등, 가짜 뉴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장민규	실패를 딛고 다시 도약하기가 너무 힘든 사회는 옳지않습니다.
노주현	용팔이 같은 가격가지고 담합하는 장사꾼들 처벌을 할수는 없나요
오동곤	한국 사회서 자격증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지, 비전문가의 진입을 막는 것인지?
장현순	무한 경쟁의 해결책이 있을까요?
정여주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가?
강양원	상식 사회 구현을 위한 입법을 제안합니다.
백정혜	왜 공권력은 강자들의 고민만 해결하려 할까요?
김영호	왜 아직까지도 학연,혈연,지연 이용 금지법을 당장 안 만드나요?
홍영표	로또 번호 준다거나 주식 추천한다고 광고하는 사람들, 왜 조사 안 하나요?
박정식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도덕성이 중요한 직업에 종사 못하게 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서재관	우리사회는 너무도 비합리적인 사람을 언제까지 수용하고 받아드려야 할까?
김기완	아이들이 성적 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사회가 올 수 있을까요?
박도원	한국 사회는 왜 학연 지연등 연줄이 없이는 살아가는게 쉽지 않을까요?
김형준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 민주공화정은 가능할까요?
오철욱	조작을 의심받는 로또 추첨 현행 제도로 해야 하나요
김민석	히어로 펀드가 필요합니다
윤송희	채상병 사건을 파헤치려 했던 노은결 소령이 복권될 수 있게 해 주세요!
한수진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언제쯤이면 모두가 다름을 인정할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회가 될수 있을까요?
김준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불법, 탈법, 불평부당하게 유실되는 사회적 비용으로 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태화	우리 사회에서 실패, 도전의 기회는 왜 없는지?
이진구	실패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면 어떨까요?
이석태	내부고발의 강력한 보장이 왜 필요한가?
hiroquet36	보편적인 게으를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은 어떨까?
9birdwatching	경쟁사회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을 챙겨가지 않고 내버려둔게 그런 노인들을 만들어 낸건 아닐까
calm7567	혐오와 적대의 표현만이라도 사회적으로 규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비치-d3v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jionxiu	학벌과 학력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됨됨이가 우선되는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만진	이런 진급 승진 임용을 바로 잡을 수 없을까요?
유수민	무엇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회를 만들었을까요?
국윤성	블록체인을 통해 사회 신뢰비용의 감소가 가능할까요?
이미진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받을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서경태	공정이란 무엇인가? 공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최주천	부정축재 환수 여론을 모으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대송	변호사 자격증에 학벌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공평한 경쟁과 평등을 해치고 차별을 당연시하는 우리사회의 특권층 과 계급사회 만들기의
	초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민보규	정신질환 환자들은 왜 위험 인물로 낙인찍혀야 할까요?
방민서	경남은 왜 저 정신건강 복지영역에서 예산이 꼴찌인가요?
문제은	우리 대한민국은 신용사회인가요?
안상윤	기부 단체, 봉사 단체 운영을 점검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덕현	지원금 빼먹지 좀 못하게 해주세요.
최영탁	대한민국은 왜 공멸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인가?
임진성	한국은 인생에 있어서 왜 한번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었나요?
김영환	자격증, 졸업장, 학위증. 필요한가?
이은솔	우리 사회에서 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예진	사회극우화와 혐오정치를 뿌리뽑기위해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윤명희	낙하산 채용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 주세요.
조동근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현이	다시 기회를 주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김효경	현재의 경찰이 과연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까요?
하준서	공무원 인사 제도를 뜯어고쳐 부조리한 공직자를 제재하도록 합시다.
조준상	세월호 관련자 책임자들 처벌은 안 하나요?
신의철	공정한 사회가 이토록 어렵고, 불가능한 걸까요?
김원희	천부인권. 국민기본권 & 사회정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범죄 기소청' 설치를 제안 ?
윤성원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해, 불평등한 사회를 재조정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희철	우리는 왜 부조리를 당연시 해야 하나요?
박상기	로또 당첨 번호가 조작되지 않는지 확실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박찬식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윤서	왜 한국은 아직도 초등학생의 운동회부터 거의 모든 공식행사에서 당연하다는 듯 전체주의와 파쇼적 행동양식을 강요하고 일제와 독재자들의
	상징이었던 '국민의례와 애국가제창'을 강요할까요?
정해원	폭력은 때에 따라서 필요한가?
박정현	불합리, 불공정 사회를 바꾸시렵니까?
박세진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공평할까..?
김두리	심리학과 졸업생들을 교육시켜 상담소를 많이 설치해 정신이 건강한 젊은이들 많아졌으면 합니다.
곽복임	사회적대화를 일상 시스템으로 작용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화향	특혜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유규정	언제까지 높은 자살률을 방치할건가요
신홍섭	사립대학 재단의 친인척 족벌체제 비리와 부패 사전 예방이 가능한 것인가?
신동호	국가정보원 은퇴자는 왜 중견기업, 대기업 사외이사를 할까요?
임정훈	배달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에 대한, 정부 또는 입법 차원의 수수료율 규제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재난 관리

김형윤	왜 우린 참사의 원인규명을 못하는 것일까요?
홍승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길거리 흡연, 방치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이종운	대한민국은 왜 자전거 도둑국가의 오명을 가졌는가요?
윤용학	음주운전은 중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음주운전문화는 현격하게 개선되지 않을까요?
황정희	징벌적 배상제도가 우리 사회 전반에 시행되는 건 불가능할까요?
이동림	매일 38명 자살, 우리는 방관자로써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한진희	왜 범죄자의 대부분은 남성인가요?
이강준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단속은 누가합니까?
이강준	공원내 위법행위는 왜 단속을 하지 않나요?
황승미	국가적 재난은 왜 국민이 알도록 낱낱이 밝혀지지 않을까?
김승현	사회적 참사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가족은 왜 납득이 되는 설명을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들을 수 없나요?
주세호	대한민국은 행복지수가 왜 낮아야만 하는가?
박선영	한국의 자살률은 왜 이렇게 높은가?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하는가?
김동구	대한민국이라는 현재 국가 시스템은 이미 실패한 게 아닐까? (자살사망자수 역대최고치 전망)
탁수신	이런 Emergency Alarm System이 구축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장문규	담배가 왜 기호식품이라 하여 그 연기를 강제로 마시는 피해를 입어야하고 길바닥에 꽁초들이 넘쳐날까요?
황종락	대한민국의 청소년 흡연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유봉근	행복지수 최하위, 자살률 최상위… 한국 사회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까?자살률
김요섭	돈갚지않는 사람 사기꾼들에게 법은, 사회는 왜이렇게 관대한가요?
김진욱	우리는 왜 실패를 반복하는가?
곽정인	미성년자 담배 및 주류 구입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왜 피해자인 판매자가 져야 합니까?
김영호	왜 요즘 사회적으로 만연한 친족 상속범죄에 대한 법을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안 만드나요?
전희숙	제주항공참사 추모공원은 누구를 위한 공원일까요?
김용규	간호사였던 아들의 자살 막을 수 없었을까요?
문혜연	저희 아버지의 다른 이름은 '건설 산재 서울 마포구 추락사'입니다.
우준식	왜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지 못하는 거?
손의세	왜? 무거운 안전화를 신어야 하나요? 제발! 안전 규정을 세분화 해주세요
이동원	우리 사회는 전쟁/재난의 위험에 얼마나 대비 되어 있을까?
김산일	공익 제보자 제도를 강화 시키고 사회의 안 보이는 곳을 지킬수 있는 포상금 제도를 강화 시켜야
김혜진	담배꽁초를 바닥에 그냥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문지훈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왜 단속하지 않을까요?
전영후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정혜	음주운전은 대체 왜 없어지지 않나요?
홍영표	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죄자들에게 3D 업종의 일을 시킬 수 없을까요?
최가라뫼	내란 심리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상권	군사력 5위 경제 10위 대한민국 국민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
민동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언제쯤 보통 시민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은준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악용하는 놈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김영호	국가반란 외환유치 내란수괴의 독재시도를 막기 위한 전국민 총기소지허용법을 당장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박정인	왜 한국의 사기 범죄는 처벌이 이렇게 가볍나요?
박용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살인자를 왜 일반사람에게 방치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조욱	이 사회의 문제는 청소년 흡연 같은 사소한 부분부터 제대로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정민	우리나라는 왜 자살율이 점점 높아지나요?
유선영	자전거 도둑 맞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전봉조	왜 우리는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관대한가?
김기연	또 OECD 자살율 1위, 있는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데, 저출생 문제만 해결하면 인구 문제가 나아질까요?
전용완	부패가 당연해진 세상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류형근	길거리 흡연은 왜 막지 못하나요?
주봉실	자살률이 너무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고 싶은 사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하림	범죄자를 강력한 규율로 억압해 수를 줄이는게 사회 전체에 이득일까요?
원유호	담배 판매 및 흡연 금지 법안을 제정할 수 있나요?
조승연	왜 금연아파트 단지 내에서 흡연이 가능한가?
조승연	왜 흡연하는 사람들은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나?
고다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적어도 죄를 저지르면 똑같이 처벌 받는 사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용구	사형제도 재개 합시다.
SUNNY	왜 한국의 재난사고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이렇게 많은가?
이윤희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진우	시민들 홧병나게 하는 각종 민생 법안은 왜 이렇게 빨리 만들지 못할까요?
송세나	재난 발생시 유족 모두에게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이요원	대규모 사고의 전말이 숨겨지는 이유는 뭔가요?
여경희	제주항공은 대형 참사가 났음에도 항공운송을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한두희	선진국처럼 자살율을 낮추면서 세수확보와 2030 청년남성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입법 가능할까요?
이돈희	대한민국 전세계 자살율 1위인데, 그마저도 역대 최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송수윤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왜 이렇게 높을까요?
정덕현	범죄자가 응당 합당한 벌을 받는 세상을 꿈꿉니다.
최영재	현장 대응능력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소방조직 개편(최영재)
강안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범죄는 왜 줄어들지 않고 있나요?
조용미	어린이들에게도 누군가를 잃으면 애도의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신형준	왜 사고 후 정책은 졸속으로 만들어 지는가?
황용하	급증하는 사기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윤진	모바일로 쉽게 대출받는 제도가 사라져야한다고보는데요
장순영	교제 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조속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건석	행복지수 OECD 꼴찌 수준, 한국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조윤형	음주운전자에게 왜 세 번의 기회를 주나요?
김영남	세종안성고속도로현장 교량 붕괴사고를 보며 발주자는 사고책임에서 자유로운가 ?
홍가람	무작정 금연 구역을 늘리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이승훈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라 자살률이 문제가 아닐까?
도완영	자살율 1위, 내전상태같은 사망자 숫자 이거 국가와 사회가 그냥 지나칠 문제인가요?
김민정	초중고 학생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학교 앞 육교 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이준모	천안함 조작에 대해서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배진희	길거리 흡연을 정확히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동주	담배는 어디서 피워야 합니까?
박래권	성숙한 흡연문화가 되려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정부환	큰불이 났을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까지만 하는데 국가재난인데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한다면 왜 군대는 동원되지 않나요?
최성준	산불이 번질 때, 누가 책임지나요? 왜 산 하나를 세 부처가 나눠서 관리하죠?
류제성	산불확산 방지책 필요합니다.
김건희	길거리 현수막 못하게 하고,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신희곤	화재로 집을 잃은 분들을 실내체육관에 텐트를 치고 거주 하게 하는 것은 하루 이틀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연수원 시설같은곳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국민권익

박용진	왜 자동차 급발진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유성귀	현대판 정도전 필요 없나요?
김동균	질문하는 사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이원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고유전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며 혁신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이강준	이륜차 위법행위는 언제까지 두고봐야하나요?
박석연	우리는 지금 시급히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고쳐(개선) 나갈까요?
오항녕	공공자산(공유재, 공유지)이 왜 그렇게 쉽게 개인, 기업에 매각 될까요?
강성승	현 우리나라의 연구 생태계 이대로 좋은가?
김종민	사회 대개혁 언제 쯤 올가요?
신동훈	국민자격으로 평생동안 한번의 안식년을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나연	20대 남자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스포츠에 민주당이 관심을 주면 어떨까요?
송영규	오토바이(배달라이더)는 교통법규를 완전 무시하고 다녀도 제재 할 수 없나?
조봉국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김영호	왜 kt코레일 대한항공 서울대서울대병원 등 국가가 직접 운영해서 가격장난질을 예방하지 않나요?
고유정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문제가 무엇인가 고민해봤습니다.
정중식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10년 후인 2035년, 20년 후인 2045년의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기본소득이 있다면 조금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산업시대에 맞추어진 등교시간, 모험을 불러일으킬 위험 시설물이 사라진 공원.
최진섭	자동차 불법 틴팅을 막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장성진	대한민국에 산적한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를 공론화하여 정할수 없을까요?
김시연	국가 자본이 어디에 쓰였는지, 잘못 쓰였을 때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일반 시민에게 공개할 수는 없나요?
이승윤	대한민국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김영환	새마을 운동, 경부 고속도로는 박정희씨가 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피땀과 목숨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김동주	평소 느끼고 있었고 하고 싶었던 질문들입니다.(출산율, 취업, 주거관련, 경제관련)
안병국	자동차 보험의 연령 특약 요율을 변경해야 한다.

백명석	버스 내릴때 정차 후 일어서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열	전국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건 어려울까?
김현조	농어촌에도 헬스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왜 없을까요?
현재휘	단위농협의 규약, 규정, 업무방법 등 정보공개를 왜 안하나요?
윤연정	크리스마스를 국가공휴일에서 제외할 거죠?
김광용	개인들의 '행복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 공통의,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전종열	정상적인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 완전한 정보공개 입니다.
신성호	화폐 개혁을 통한 사회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박용진	무료 와이파이를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할 수 없을까요?
최경희	우리는 언제쯤 유럽처럼 여름휴가를 한 달 갈 수 있나요?
강화중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최환석	불법 주차로 인해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주차 차량과 운전 차량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동곤	우리사회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가?
김영준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는 시스템을 뒤집을 순 없을까?
서성영	공유 킥보드 무단주차문제 해결법은?
김재호	본적 제도는 왜 존재 하는 건가요?
JK-ur2vq	자동차 정비업계의 박리다매 현실 때문에 국민의 안전이 위태롭습니다.
김종섭	자동차 사고 시 상호 과실비율을 따지고 정하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성현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면 명문고 명문대도 가고 좋은 직장에 일할 수 있는 세상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최준원	관공서및 학교 출,퇴근 2부제를 제안합니다.
이강주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시의 증명사진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박선규	어린이집에서 대체 교사를 구할 때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방법을 제안합니다.
구강영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충분치 않다.
윤성원	왜 우리의 공공환경, 공공서비스는 가장 싼 가격으로 보잘것없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김종갑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화하지 않는 이유는?
장경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한 차량의 폐차 및 수출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사용 실태와 수출로 발생한 수익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요?
황도경	보험개발원의 차량 등급 합리적이고 공정한가요?
임강빈	명절 시기를 뒤로 늦춥시다
마용철	국민의 의견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나라	사회가 과거에 회복 치유 되어가는 과정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규	헌법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팩트체크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제도, 통계 등에 관한 팩트 공증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국론분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가짜 뉴스가 번식하지못하게 해주세요.
김민정	ai+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AI기반의 창작.의료.기술 +연금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최경원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대 한국인! 그 해법은?
김필순	현재의 극단적 갈등 상황을 만든 반민족 세력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오순이	고위 공직자와 정치가는 정직하지 않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강치원	일부 공휴일을 일반 기념일로 바꾸고 명절 연휴를 늘리면 어떨까 합니다.
박진형	공사부분(예,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기타등등) 및 의료 민영화를 꿈도 못 꾸도록 헌법에 명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식	지역민을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방법 및 개선 방안은?
하태환	대한민국의 진정한 저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김진희	사회복지 필요성을 왜 개인 복지사들이 찾아내야 하는 걸까?.
HANCHENG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개인주의 사회로 전환하고, 인문학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성수아	전기 가스 수도 공항 도로 항만 등의 국가 기반시설은 민간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할 수 없나요?
조용환	트럭 후진시 벨소리 의무 어떤가요?
방가영	음주운전자들 면허 재취득할시 번호판 색상을 빨간색이나 형광핑크색으로 해주세요
김명재	자동차 보험료와 사고처리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되나요?
허영란	버스와 기차도 지하철처럼 출입구 계단 없애면 안될까요?

사회규범

임희정	한국인의 중산층 기준은?
조윤서	왜 우리는 길에서 침 뱉는 행동에 관대한가요?
윤성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법과 윤리

공정성

이상미	왜 이 나라는 가해자의 나라인가요?
한동환	왜 법은 평등하다고 하는데 해석에 따라 달라지게 만드나요?
김범석	왜 평범한 사람도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냐?
윤희정	사법은 선택적 처벌인가요?
권미라	법앞엔 모두가 똑같다라고 하잖아요
전희정	검찰은 왜 죄를 짓고도 벌받지 않나요?
신민호	판사의 범죄를 판사가 재판하게 하는게 맞나?
고대영	대한민국은 진정 내부자고발자를 원하는가 ?
손도현	불관용은 관용의 대상이 되는가요?
노승찬	정의로운 서민들이 부당한 가진자와의 법적인 다툼을 벌일 때 정의로운 서민이 불필요한 변호사비용의 부담을 갖지않고 법적 다툼에서 이길 방법은 없나요?
이철호	법원의 판결이 편향적이지 않고 공정한 판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상원	국가는 가해자들을 왜 방치하고 있는가?
김철구	법은 왜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할까?
홍창효	지역 공직자 유착형 귀농귀촌 사기사건은 어째서 해결이 잘 안될까요?

이태현	왜 언제부터 법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준이 됐을까요?
표형종	법은 왜 평등하지 않나
김병철	판사가 틀린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양정인	대한민국에서 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는가?
박용진	왜 재판 결과가 오락가락 하나요?
최연화	대한민국은 왜 큰 도둑들에게 관대한가?
홍대식	왜 검사의 판사는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없는가?
이정훈	검사 판사의 잘못은?
김현우	왜 정의가 지켜지지 않을까요?
이수인	법의 처벌은 왜 일반 시민에게만 엄격한가요?
서승모	법원 판결이 왜 국민의 힘쪽 보수정당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자비스러운지
이상무	왜 잘못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나?
권민성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법 활동을 하고 있고 해왔는지 왜 이렇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까??
강성록	검사 판사 국회의원 범죄조직원들 왜 잡지 못하나?
남진희	왜 법원의 판결문을 일반인들이 보기 어려운가?
김세호	국민연금법 왜 편파적인가...?
박기표	검사는 왜 일반인과 다른가?
이용운	왜 모든 법정에서 판사만이 모든 판단을 하고 판결하나요?
김용수	과태료로(돈으로) 겁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허정희	나라의 잘못된 관행을 한 학생 한 가족에게만 따지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는가?
김태리	증거가 불충분할 때 피고의 이익으로 한다..가 지켜지지 않는 법정
김민중	과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
김영배	우리나라의 법은 정의롭고,공정한가?
노청호	대통령 주위의 인물들은 왜 법을 마음대로 어기나?
이호성	법은 만인에만 평등한가?
김윤중	기득권 불법 점거 세력을 어떻게 와해 시킬 것인가? 그리고 비슷한 질문들
김후동	모든 민사, 형사재판을 진행과정 및 판결문을 일반공개 하는 방법 없을까요?
CHOI HOUN JIN	우리나라는 왜 xx원 이하라는 언어를 쓰나요? 또 왜 그렇게 과태료가 낮은가요? 모두에게 같은 과태료를 묻는게 정당한가요?
이진우	법원의 판결이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무죄에서 유죄,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법적 판단의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나요
유상운	국민의 눈높이 그 누가봐도 나쁜 짓, 사람 이런건 현실에 맞게 법이 강력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손용환	판사가 신인가?
김경숙	죄는 국가가 물으면서 왜 죄에서 구제는 돈으로 해결하라 하는가?
정해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조문은 한자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국민들을 괴롭힌 일본 식 조문으로 가득 차 있나요?
김경숙	왜 법관 몇몇이 5000만 국민과 국가 그리고 민족의 미래를 결정 짓는 판결을 영원히 확정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안유환	상식과 다른 판결은 왜 나오나요?
정용상	판사 몇 명이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이 과연 있는가? 왜 우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마음 졸여야 하나?
김철	법관의 양심만으로 판결받지 않고 공정한 판결받을수 있는 날은 언제 오나요?
안정호	기성 언론의 마녀 사냥이 헌법 27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는 무죄인가?
정해광	법원결정과 일반시민과의 법괴리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해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에 관련된 것들이 법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할 수 없을까요?
안진홍	가해자는 변호인 앞세우는데 피해자는 방청석서 판결 선고일까지 발언권도 없이 권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발만 동동구르는 사법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
전선영	현 시점에서 대대적으로 상식과 현실에 맞는 개헌을 논의해봐야하지 않을까요?
권영효	검사가 해야 할 기소를 하지 않을 때 기소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고 잘못된 기소를 해서 패소했을 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최기호	판사의 판결은 법치의 최종 보루이다. 따라서 판사는 자신의 판결문에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모든 판결문은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공공 웹사이트가 있어야 판결문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곽정인	촉법 연령제한을 내려야 하지 않나요?
서민숙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준서	공정한 법치를 위한 방법은 가까이에 있지 않나요?
김지용	왜 대통령등 공무원의 명칭이 마음에 와닿지 않죠? 법률용어는요?
오연경	법률용어들은 왜 어려운 말로 되어 있나요?
오완영	사법부의 판결이 과연 현재 공정한가?
하미선	기소된 피고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까?
하미선	대한민국 판사는 신입니까?
윤석찬	법률 용어를 왜 우리말로 쉽게 바꾸지 못하나요?
하미선	객관적인 물증 증거가 없는데 증인의 증언만으로 판결의 증거로 삼아 판결해도 되나요?
우준식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가?
백정혜	법이 너무 복잡해요
김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노섭	대한민국은 왜 범죄자에게 관대한가?
최재원	우리나라 법은 왜 기득권에게만 강한가?
이상곤	피의자가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을 하는 법관을 사회에서 그대로 두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 아닐까요?
최가라뫼	기득권 자산구조에 따라 영향을 주는 법률을 정리 해주세요.
김종두	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심세훈	확정된 판결문 공개가 왜 되지 않습니까?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를 공유할 수 없나요?
이경민	법은 왜 어려운걸까요?
홍창효	왜 대한민국의 형량 기준은 민의와 다를까?
이홍원	비슷한 사건 이라도 사법부의 판사가 다르면 형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 맞을까요? 판사의 판결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판사는 항상 옳은가요?
김희생	법관들의 판결은 정당한가

박상현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위원도 ,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는데, 판사는 왜 국민이
	뽑지 않나요?
이소연	'하늘이 법'이 진짜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진수	대한민국은 왜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박명은	재판은 과연 공정한가? 3심 제도가 공정한가?
김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억만장자-m5z	모든 국민에게 법이 평등할 수 있는 세상이 올까?
김종섭	형사법상 형량과 벌금은 왜 현실화 되지 않나요?
김정민	언제쯤 법이 강자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최준호	법률에 적시된 벌금 액수에 관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성규	법과 공권력이 힘이 있고 바로서는 사회를 만듭시다.
서원호	판사의 판결이 언제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건 아니잖아요?
황정선	안전 관련 법령 관해서 법령이나 행정규칙 간의 내용이나 용어의 일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수	10년전 판사의 범죄행위를 알았다는 이유로 판사와 그 공범들로 부터 전 재산을 강탈당했습니다. 판사의 불법행위는 국민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거 아닐까요?
해양현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은 올 수 있을까?
박선희	대한민국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요?
김지현	민간인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초법적인 신입니까? 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화영	법이 문제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법을 어긴 검찰을 처벌할 법이 없는건가요?
김세진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든 규제가 많다..?
송창준	판사들은 본인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 왜 평가받고 책임지지 않나요?
최환석	판결문의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옳지않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창규	국민주권으로 대통령 탄핵의결 부결시 국민주권발동으로 탄핵의결, 대통령이 사망, 사임, 탄핵 등으로 부재시 대통령직을 승계순서 및 권한대행
	업무범위 법개정 및 명시
정창규	미국과 같이 채무 불이행죄를 도입하여 신용 사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이덕신	왜 범죄는 반복되는가?/ 범죄수익 환수는 어째서 저조한가?
김희숙	정말 법은 만인에게 공평한가요?
김명환	산림기술용역 전문업 등록 시 기술사 외 기사1인을 명문화하는 규제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이진재	벌금형이 과연 벌금이 될 수 있을까?
배혜정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피해자는 왜 볼 수 없나요? 형사재판, 피해자에게도 동등한 정보접근권이 필요합니다
김윤	법원 재판시 한명의 판사가 판결을 결정하지 말고 3명 이상의 판사가 판결하면 안되나요?
장준영	법치국가, 시스템의 국가에서 '수사'와 '재판'은 왜? 니맘 내맘 고무줄인가요?
신의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왜 법은 관대한가요?
황지영	왜 범인들의 형량은 이리도 낮은 걸까요?
박진형	판사들이 판결하고나서의 판례를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범	왜 역사는 반복될까요?
방가영	우리나라 인권은 가해자가 우선인가? 인권위는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가 우선인가? 한국사회가 생각하는 인권이 무엇인가?
한승협	왜 국가 중대사에 대한 판결을 판사 개인이 하나요?
박용식	법원의 판결을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도완영	300억 이상 경제 사범은 모두 형을 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이게 옳은가요?
성수아	우리나라에서 법을 다루는 이들, 판사, 검사, 변호사들에 대한 기소율과 처벌수위는 왜 이렇게 낮을까요?
박형래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 국가인가?
노청호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치를 왜 어기는가?
김태진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 맞나요?
주문돈	사법체제에 유감을 표합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견주에 대한 형벌과 반려견을 죽인 사람에 대한 형벌이 이게 맞나요?
박세진	무법한자에대한 신속한 처벌규정을 만들수 없는가?
유엽수	노동자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법의 잣대는 엄격하고 돈 많고 권력을 가진 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법은 솜방망이가 되는 이 사회가 좀 바로잡아졌음 좋겠다
손종남	우리 사회를 좀 먹는 비상식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김태진	법은 그 취지와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이윤수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 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이 유죄가 날 경우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나요?
함광석	왜 유사한 사건에 대해 판결 결과의 편차가 이렇게 심한 걸까요?
박형래	법을 위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정철헌	법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소정	우리나라 법은 왜 공정하지 않을까요
조서윤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나 재판관들도 처벌할수있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균	무전유죄 유전무죄 법은 누구에게도 평등한 잣대가 아닌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황정희	법이 사람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신뢰가능한가!
박성범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까?... 어떻게하면 법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을까요?.....
정재일	법원과 재판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영회	법원 판결문은 모두 API 형태로 정보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양지완	판사는 왜 피고인에게 반성문을 받고 판결하는가?
양지완	교도소에서는 왜 수용자의 인권이 교도관의 인권을 앞서는가
김민정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던데요. 악용의 소지도 많아 보여요. 사건 종결밖에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사법개혁

이석주	검사는 일개공무원일 뿐인데 대통령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있는게 정상인가?
이명규	판검사들의 카르텔은 끊을 수 없나요?
김수일	공수처의 권한과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를 견제할수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준학	의식 있는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을 검찰 상부에서 부정한 의도로 사건을 뺏어가는 병폐 해결방안?
표형종	검찰지검장도 국민이 뽑자

이종석	검찰에서의 기소권 분리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나요?
김병철	개혁될 기소청이 잘 하는지 감시하고 잘못했을 때 올바르게 견제할 수 있는 완벽한 제3의 기관의 구성과 절차는 무엇일까요?
이석희	법조인들의 무소불의 인식이 당연시 되나요
김철수	우리나라 판사는 뇌물을 받고, 공범으로 재산을 갈취해도, 행정부와 사법부는 기소하지 못하는 걸까?
진성식	사법부는 왜 선출직이 없나요?
김영호	왜 아직도 대한민국은 검찰총장제도 폐지하지 못하며 왜 검찰청을 해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김광래	검찰을 개혁하여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고, 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제도는 없는가?
노영주	사법부 구성원들을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는 없는가?
김영호	변호사시험 검사시험 판사시험을 왜 분리해서 공개경쟁채용으로 시험제도를 바꾸지 못하나요?
황신예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종경	검찰청의 장은 왜 검찰청장이 아니고 검찰총장입니까?
김서현	우리나라는 검찰청장이나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할수 없나요?
서승모	검찰개혁은 확실히 될 것 같은데 사법개혁도 될 수 있을까요?
박건영	판사가 법이 아닌 자신의 신념에 따른 판결은 매우 위험한데, 이러한 사법제도 부조리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박기호	만인의 법은 평등입니다. 왜 검찰은 무죄이고, 일반 시민은 유죄인가요?
김경진	검사와 판사의 권력 집중을 견제할 대안을 언제까지 만들 것인가
나대봉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상훈	대한민국 검찰 개혁은 왜 안 되고 있을까요?
노청호	검찰 직원들에게 왜 우리는 피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하나?
정성진	왜 판사 판결에 대해 외부 감사를 도입하지 않을까요?
황종락	경찰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꿔주세요
이종경	입법부(국회의원)와 행정부(대통령 및 각 단체장)의 상당인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면서 사법부는 단 1명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못하는 건가요?
	사법부도 국민이 선출하게 하면 안 됩니까?
정세현	검찰과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박해선	검찰개혁 공정사회구현이 가능할까요?
정원일	검찰개혁후 경찰도 검찰처럼 권력을 쫓을것 같다.
김태선	1. 검찰개혁 2.언론개혁(징벌적손해배상제등) 이후에 꼭 3. 시민의 통제받는 사법개혁을!!
정병완	검찰, 사법부,언론은 누가 심판하는가?
김충실	검찰청을 새로두고 감사원을 없앱시다.
이선희	교정본부를 분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영남	사법부의 선출직 전환은 언제 가능할까?
강대삼	공정한 검찰권과 사법권으로 사법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게 하는제도개혁은 무엇인가요?
정종주	우리 사법은 안녕 할까요?
김원희	나란히 붙어 있는 검찰청 & 법원 청사를, 물리적으로 상당한 거리에 떨어지게 배치해야 한다
최근애	검찰이 왜? 쎄졌는가 이유, 역사도요..경찰VS. 견제 그리고 그 인원과 크기는
김도균	형사 재판에서 기소와 공소 유지는 왜 검사만 해야 할까요?
최경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왜 사법부는 투표로 뽑지 않나요? 사법부는 국민이 주인이 아닌가요?
신철	왜 우리나라 사법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일까요?
박정원	사법부 판결에 대한 평가는 왜 없는가?
김용성	사법부 왜 투표로 선출되지 않을까?
김영호	왜 검사, 판사, 번호사 출신의 선출직 출마 제한법을 당장 안 만드나요?
정민규	왜 사법부는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가?
김윤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하지 않으면 공수처나, 법무부((법무부가 기소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고)가 기소 하면 안되나요?
김미라	검찰도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경찰도 수사권 기소권을 갖으면 안되나요? 견제 경쟁 되는거 아닐까요?
이현수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개혁은 끝난 것인가?
조경호	경찰은 좌파라고 좌표찍힌 쪽만 강압수사 하려는 행태를 버리고 법원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곽대종	왜 검찰청에서 기소를 독점해야 하나요?
곽대종	검찰의 기소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는 왜 없을까요?
곽대종	왜 검사들은 다른 행정부서의 직원들과 달리 높은 직급을 부여해야 하나요?
유지안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나요?
강대삼	어떻한 방법으로 검찰법및 형사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시나요?
강대삼	올바른 사법 개혁은 어떻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요?
이진성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검사(검찰)들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제정신으로 돌려놓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왜 처벌을 못하나요?
정욱	대한민국 기득권(재벌,법조,언론 등)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김연중	대한민국 검찰은 개혁할 수 없나요?
황여사하하	검찰개혁 이 되개 하려면?
조규봉	판검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 미국식으로 선출직으로 해서 국민의 주기적인 심판을 받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박세진	입법 행정부는 국민이 뽑는데 사법부는 왜 국민이 안뽑나요?
박경	정치 검사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검사들에게 왜 이리도 많은 권한을 부여한건가요?
최광호	검찰 캐비넷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
김효진	검언유착과 업무의 선택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나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도환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궁금합니다.
김원희	국가역량에너지(국론, 공정한 사회)를 상시 낭비하는 국가사법기능 제도개선 접근방안 ?
신인철	사법개혁이 필요한데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고쳐주세요..
김종갑	왜 사법부의 신뢰도가 세계 꼴찌 수준인가요
박재민	이런 검사들은 이런 검사들에 의해서 보호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황신예	검찰 개혁은 언제 될 수 있을까요?
고다원	검찰의 편파 수사 및 편파 기소를 막을 수 없을까요?
최만석	민, 형사재판 판결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덕	수사청 기소청 분리해서 또다시 수사청과 기소청을 다른 독재 세력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거나 각 기관들의 기관 이익 독재로 넘긴다면!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길성철	언제쯤 검찰개혁이 이뤄질까요?
하준서	기소 편의 독점주의는 타파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환석	고등 판사, 고등 검사(검사장?) 이상을 선출직으로 임명하면 국민의 법감정과 다른 판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대성	검찰의 무소 권력을 재분배 해야 합니다! 검찰의 기소권을 유지하고 수사권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상길	검찰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적용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강치원	판사, 검사 출신 전관예우는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판사, 검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폐지해야 하지 않나요?
정태용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배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정재일	기소권과 재판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문민식	검사 판사 견제장치를 만들어 볼까요?
김옥륜	검찰개혁.언론개혁 거짓 사실을 진짜인듯 오보로 국민을 선동하거나 이득을 보는 행위에대한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하다
박성범	사법부의 직선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김진태	검찰도 법 원칙대로 수사를 안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박정원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전횡을 어떻게 견제하고 결과에 대해 평가할 것인가?
asajong33	왜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지수가 135개국에서 꼴찌 수준인가요
박희성	재심 무죄 사건에 관여한 검사, 판사들이 처벌받았다는 소식이 없는 것인가요?
오세훈	사법개혁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민주 정권 재창출 이후에는 다양한 개혁과제(검찰, 사법, 정치, 경제)들 중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강대삼	검찰청법등 사법개혁을 반드시 해 야 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안.
홍성훈	검찰 불기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치 않나?
박필호	민주당에서 검찰개혁방안을 준비 중이던데 공개토론 혹은 공청회나 기타 일반 국민 및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가질 생각이 있는지?
노청호	검찰은 왜 본인의 이익만 추구하므로서 매국 행위를 하는가?
김인애	검찰청 총장 직책을 바르게 수정해주세요.
노청호	왜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검찰 직원들을 3급으로 채용하는 가?
노청호	검찰에 왜 차관급이 10명인가?
이석남	사법부(재판부, 검찰) 개혁은 불가능한것인가?
노청호	검사와 판사는 신의 영역인가?
노청호	검사는 왜 본인들의 잣대로 기소와 항고를 마구 휘둘러대는가?
박승원	사법개혁을 위해 법 제정 취지의 법률 문서화, 공수처의 정립, 판사 배당의 탈디지털화, 수형생활의 표준화, 재판 진행의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청호	왜 검찰의 칼날은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권력자를 위해 쓰는가?
노청호	검찰의 기소와 항고는 왜 공정하지 못한가?
이동희	차기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검사 퇴직후 변호사취업 3년간 금지시켜 주세요.
최창호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부작용과 오류 없이 검찰을 해체하고 지난 3년의 부패를 처벌할 수 있을까?
이명옥	검찰공화국을 견제할만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김철	사법개혁과 권력형 카르텔 단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원홍	사법적 권력기관,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박건영	판사의 판결이 신뢰를 얻을수 있도록 새로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호준	법률을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과 외적인 이유로 판결을 달리하는 판사는 제제를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훈	사법개혁을 제안합니다.
노청호	판사가 판결을 1심에서라도 잘못했을때 이를 처벌할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노청호	검사가 잘못을 했을때 어떤 처벌을 할수 있나요?
이윤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현실에 대해
김선흥	헌재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남병철	사법 권력을 서비스로 재설계할 수 있다면, 인간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는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노청호	왜 검찰은 표적수사를 하는가?
박상진	무법한 검찰과 법원은 누가 처벌하나요?
노청호	왜 검찰을 해체시켜야 하나?
박계순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나라의 운명을 판사의 결정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최재호	부정부패 한 판검사는 변호사도 못하게 하고 법 개정후 다시 개정 할려면 국민투표로 승인 얻는 이런 제도는 어떤가요?
안원석	판사의 판결은 누가 견제하나요?(의료소송)
김진태	헌재 재판관 위협 받아 늦어지는 건 아닐까요? 더불어 민주 관리자님 관심있게 읽어 주세요.
한승협	판사도 사람인데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는게, 근원적 시스템 오류 아닐까요?
박규삼	법원의 보수화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노청호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판결하거나, 외압을 받고 잘못 판결하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잘못 판결한 판사는 어떻게 처벌해야하나?
노청호	내란 공범이며 범죄자 집단인 검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청호	국민의 이익에 반하여 내란 동조하는 법조 보수 카르텔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윤표	조속히 검찰조직을 해체하고 기소청을 두어 기소독점주의 를 견제하는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김종수	비리+뇌물 +수사조작+ 마음대로 기소하는 법기술자 검찰 해체해야 하지 않나요?
김종수	국민법 감정을 개무시 하는 사법부 개혁해야 한다.
김종수	검사들의 수사조작+사기 엄벌 하는 법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희성	지귀연 판사 왜 탄핵 안하나요?
박상덕	지귀연과 심우정과 헌재의 간교함이 앞으로 다른 판검사에게 또 다시 생기 않게 막을 실제적이면서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요?
김수근	사법 · 검찰 · 경찰조작 개혁 글을 올렸다가 경검의 표적이 되어 조작에 엮여 생업까지 영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될 우려가 없는지 걱정이
	되는군요 대안이 있는지요

법과 질서

김정수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하는 게 가능한가요?
김시규	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가요?
이재혁	수사경찰관은 수사는 엉망으로 하는데 왜 책임은 지지 않나요?
정성화	유독 사기에 대해 관대한 이유가 뭘까요?

강호영	사기 범죄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이중희	술과 마약에 빠진 이들이 사고를 치면 심신미약이라고 하며 왜 감형을 해주나요?
박수철	흔히들 받는 마사지가 왜 불법이 되어야 하는가?
모현진	현실에서 가장 큰 피해는 사기꾼인데 그들의 처벌은 왜 80년대의 법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요??(사기도 강력 범죄인 시대다)
이강준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왜 국민정서보다 낮은가요?
유재욱	인천세관 밀반입 마약 수사무마 외압 의혹의 마약을 계엄군에게 먹였다면 계엄군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철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성욕 우리는 언제까지 성을 개인의 영역으로 맡기고 공공연한 비밀로만 남겨둘 것이가?
이정섭	대한민국은 왜 사기꾼 천국인가?
최가라뫼	교도소 노역 일당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주세요.
구민우	경찰입니다. 정치적 중립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김수진	검찰은 왜 범죄수익환수를 안 할까요?
서지현	왜 우리나라 범죄 형량은 미국이나 타국가에 비해 낮나요?
손근	초범(성추행범)은 대부분 징역3년을 받던데 이게 맞나요?
김영호	왜 친족의 상속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당한 강력한 가중처벌이 아직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것인가요?
문경식	사기죄 처벌이 약하다.
김영호	왜 조직폭력범죄자들에게 폭력조직을 결성한 것 자체만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 집행하지 못하는 건가요?
김종남	민주사회의 여론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짓말을 처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창효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어째서 범죄일까?
김영호	왜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 위법명령에 대한 공무원들의 항명 구제법은 왜 없나요?
오광섭	엄중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범죄들의 형량 상향은 왜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양창규	대한민국은 사기범죄에 대해 왜 관대한가?
양승미	성범죄자 신상 고지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경숙	권력을 많이 대리하면 할 수록 그 죄에 대한 벌이 가중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해서 공소시효가 더 늘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민섭	벌금에는 왜 인플레이션이 반영안되나요?
김지현	우리나라는 왜 여성범죄나 살인죄에 대한 처벌형량이 약한건가요?
조원향	사기 등 부정당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장미영	대한민국은 왜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형량이 여전히 가벼운가?
윤동환	미국처럼 법을 무섭게 만들수는 없나요?
황명희	성범죄, 데이트폭력 처벌 수위를 왜 높이지 않는 건가요?
김일권	우리나라는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고,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 관대한가?
안길환	매스컴에 보도되는 청소년 관련 범죄가 죄질이 심각하게 나쁜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할 경우가 있는데 왜 강력한 처벌로 다스리지 못할까요?
박성진	한국의 사법제도는 아직도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이동현	한국의 법적 처벌수위가 적절한가요
공진세	범죄수익은 반드시 법적으로 회수되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공진세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사실에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주	공항 마약 밀수범을 도와준 세관원들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지 않나요?
김난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별 차등 벌금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은주	사형을 다시 실행해 주실 수는 없는가요?
이호형	잘못된 법원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달라.
윤지석	집행유예란, 사실상 풀어주는 거 아닌가요?
김영호	왜 국가반영 외환유치 내란반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항명의 방법은 사표밖에 없나요?
김영호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수괴 윤석렬은 항명할 구제법 등이 없는 것을 악용한 것이 아닐까요?
황기철	쿠데타로 이어진 얼룩진 역사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사형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김용진	사기를 친사람의 형량도 너무 낮고 청소년에 맞는 형량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개선할 수 없을까요?
장준영	음주운전 관련법, 국회의원들은 왜 처벌 법을 강하게 만들지 않는 걸까요 ?
강민정	정의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한 곽종근 사령관님 같은 분은 이번 내란사건을 발빼하는 이들과 구분되어야 하고 선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손흥민	사기꾼 형량 상향, 검거율 상향, 적극적 피해회복 제도 필요합니다.
박성만	우리나라는 징벌적 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지 않는가?
최중민	대한민국 형벌이나 벌금의 수위가 너무 낮지 않은가?
최준호	요즘 같은 어지러운 세상에 극악무도한 자들에 대한 사형집행이 절실히 필요한 때 아닐까요?
정영국	범죄에 왜 공소시효를 두나요?
김재원	토건 비리 척결은 왜 안되나요?
김영호	왜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의 항명구제법을 아직도 구체적으로 똑바로 안 만드나요?
박나우	대마초는 왜 합법화되어야 할까요?
이세형	사기꾼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원근재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중하게 형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정진	법이 악용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법 : 사실적시 명예훼손
김란희	중죄에 대한 처벌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한다.
박소영	수십 년 옥살이를 한 뒤 무죄 판결, 애초에 죄 없는 사람을 가둔 그들은 누가 벌을 줍니까?
김옥례	악질 범죄자들 얼굴은 왜 모자이크 처리하나요?
김은희	촉법소년 연령 하향등의 엄벌주의 정책이 소년범률 감소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가?
김유라	심신미약이 감형 사유가 아니라 병원 진료 강제 후 형 집행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은영	법적 절차는 거쳤지만 억울한 수사와 기소와 재판으로 피의자가 되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구제할 방법은 없는가?
양명석	우리나라 사형 왜 못하는 걸까요?
솔솔봄바람-o2u	공소시효는 왜 필요한가?
조이수진	전세 사기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김민석	여자의 일관된 진술은 증거로 인정한다는 희대의 미친 법정신은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김동직	형법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현미	왜 우리나라는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약한가요?

박세진	돈으로 장난친 범죄자의 재산은 왜 몰수하지 않나요? 친일파의 재산몰수 모두 왜 하지않을까요? 못한다면 왜 못할까요?
박정은	최근 성행하는 부업사기 왜 피해자가 계속 늘고 근절이 안되나요?
박숙정	사법피해자를 구제 할 방법이 없나요?
최광호	위증을 줄일 수 없나요?
송인범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26년이 넘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급자같은 저소득층의 채무문제를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주실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소영	어마어마한 사기를 쳐도 징역 15년 형만 살면 끝인가요?
최준호	심신미약 감형은 과연 정당한가요?
장석곤	허위 무고로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김지애	음주한 사람들이 왜 심신미약 일까요?
전슬	인천마약사건 수사는 왜 안한건가요?
박종기	백해룡 마약 수사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주세요
김현정	왜 짐승보다 못한 강력 범죄자들을 인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세금으로 케어해 줍니까?
임성희	성 범죄자 형량은 왜 50~60년대 기준일까요?
임강빈	법조인 밥그릇 지키는 비합리적인 형량 개선하자
김경웅	사기범죄, 성범죄, 성범죄 무고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은 불가능한가요?
김경웅	태형을 도입하는 것이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나요?
고명환	왜 전문직, 고소득자, 고위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처벌하지 못할까요?
공진세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늘려야 합니다.
도완영	국가 배상이나 기업 배상에서 배상액이 낮아보이는데 이게 맞나요?
장영순	개인이든 기업이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사기죄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만석	공소시효, 소멸시효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요?
정송희	경찰청 인사 단행하는데 불안합니다 헌재 앞 폭동이나 대선 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신의철	세금도둑 처벌법은 없나요?
박대환	음주운전 적발 시 형량이 너무 작습니다.
백두산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에 너무 관대합니다 형량을 높일 수 없나요?
염미혜	2차 가해 또는 상처 없이 성폭력 가해자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실현 가능할까요?
김강섭	성매매. 진짜 없애지 못하는 건가요??? 안하는 건가요???
진평규	사기 범죄자 형량 너무 가볍지 않나요?
이승엽	경찰들도 개혁하실건가요?
김덕남	가정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사기죄 엄벌해야 합니다
채병철	다수를 향한 범죄의 구형은 피해자 수에 비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전세 사기, 다중을 향한 폭동, 다단계 사기, 국민을 향한 내란 등등..)
박찬식	경찰 공무원의 유흥업소 유착 근절 방안은?
김수현	촉법소년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승범	불합리한 자동차 사고 비례 책임제 ..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것은 책임을 전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영	마약 밀반입 사건을 덮어준 인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었고 그 뒤에 있는 세력이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김은희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에서 AI를 활용한 사기꾼들의 드라마나 영화속 이야기가 결코 현실보다 과장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조용환	전과가 늘어날수록 가중처벌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어떻게 전과 10범 이상이 거리를 활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양지완	사기죄는 왜 형량이 약한가?
방가영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 주세요

법률제정 및 입법방식

이영주	법 왜곡 관련 법 추진해 주세요.
김철수	피해자 가해자를 뒤집는 기소 판결을 원천적으로 봉쇄을 위한 AI도입 서둘러야?
김영열	판사, 배심원, 그리고 인공지능이 함께 재판을 하면 더 공정해질까?
강호영	대통령권한축소, 국회권한 조정 등 헌법 개정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서윤	법원 재판 판결을 재판관님을 배제한 AI가 할 수는 없는걸까요?
강대성	왜 공정한 판결을 위해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선택권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가?
이동준	국민이 바라는 헌법의 개정은?
이지훈	고 오요안나 사태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괴롭힘 방지법이 필요합니다
김영호	왜 대한민국은 학연, 지연, 혈연 이용 금지법을 만들지 못하나요?
이양성연	부모님 두분의 성을 다 이름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이름을 등록할 때 성을 두개로 늘릴 수는 없나요
문은주	반민족법을 만들어서 반민족적인 행위를 하는 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김진도	1심,2심 모두 일반인을 배심원으로 두고 유무죄를 판단 하고 형량 부분만 판사(이것도 사실 AI가 하는게 맞을지도)가 관여 하게 법을 바꿔야 하지 않나요?
윤지석	'한국적 홀로코스트법'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경희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서 배심원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이원희	범죄자 특히 독재자의 부정하게 축재된 재산을 추적하여 징수 하지 않는가?
문신열	'갑질'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박규삼	혁명의 완성은 개헌이다. 제발 (이 탄핵 사태가 지나면) 개헌을 좀 해서 87체제를 벗고, 반드시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
박규삼	사법 제도를 전반적으로 다시 설계했으면 좋겠다.
성능	무기소 검사, 무오류 판사 이 거대 권력 카르텔은 어떻게 조기 종식 시킬 수 있나요?
김지연	소수의 비상식적 판사의 폐단을 억제하는 [국민재판소]는 어떨까요?
김종갑	사법권을 주권자에게 통제할 수 있도록 배심원제나 참심제로 유무죄 판단을 주권에게
박창길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모든 범법자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JOHN J KIM	재외국민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 고소 고발이 되면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왜 여권도 못 만들게 하나요?
박성범	검찰, 사법개혁을 위한 개헌계획은?
이우진	뒷담화는 범죄일까요?
안태용	정당방위 성립요건 조정 및 인정범위 확대는 언제쯤 가능할까? 아직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법을 바꿀까?
최종섭	공무원 임용 시기에 따라 정년 후 연금 수령 이전까지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기호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재판에서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오면, 해당 재판에 배심원제를 자동 적용하도록 할 수 없을까?
홍승인	법원판결시스템을 미국처럼 배심원제도로 개혁합시다. 사법비리를 해결할 마지막 해법아닙니까?

김광철	거리의 안전과 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가로수, 전신주에 설치된 족자형 현수막 포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동희	공약 이행하지 않은 선출직 공무원 처벌법 시행합시다
박세종	상가건물 체육시설(러닝머신)에 의한 층간소음과 층간진동 분쟁방지 및 시대상황에 부흥하는 체육시설법 제22조 개정해야 합니다
최가라뫼	법안 표절 심사하는 건 어떨까요?
김민석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 검판사 관심법(여성의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인정) 민주당이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김민석	이런거 이렇게 못만드는 사람 기회 박탈법!
송강섭	어떻게 하면 고소 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할 수 있을까?
최윤선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범죄 처벌을 철저하게 강하게 해주세요
모강우	혐오범죄선동자 처벌과 그 범죄자의 공무원 불임용 및 공무원 임용시 서약서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송재근	AI 판검사 불가능할까요?
이정인	왜 법재정은 늘 느린가요? 예외가 발생할 시에 조치가능한 활로가 없습니다.
구준표	국가 모독죄를 신설했으면 합니다.
이대웅	1명의 판사가 판결하는 것이 옳은가? AI가 판사가 되면 공정한 판결이 되지 않을까? 축구경기 중 var 판정이 인간인 심판보다 더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처럼.
홍기상	벌금형을 노역으로 대체할 수는 있는데, 죄를 지어 수용되면 구금된 하루의 가치는 누구나 같아야 합니다.
이만구	상장사가 대주주 소유의 비상장사를 만들어서 상장사의 돈을 빼먹는거 막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박승민	명도 소송은 왜 이렇게 길어야만 하는가요?
정창규	재판도 상식적인 아닌 판결이 많기에 독일형법 처럼 법 왜곡죄가 도입되어야 하지 않나요?
정창규	검찰 기소청법안이 통과되어 무소불위 권력을 통제하고 시민 참여 배심원제도를 더 적극 활용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창규	노인핸드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통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유한	개헌! 개헌! 하는데 정치인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을 할 수 없는지요?
이상미	보수8.진보2의 법관비율이라는데 바꿀수는 없을까?? AI판사??
이요원	사악한 현수막 방지법이 필요합니다.
최가라뫼	공인의 공식적인 의미를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은정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신다면 청와대로 가주세요. 다시는 청와대를 나와서는 안되다는 헌법을 만들어주세요.
이운봉	퇴직한 명예교수들을 국가계약 사업 심사위원 섭외하여 편파적인 심사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문제 아닐까요?
최기호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야기되는 문제가 많은데, 도움되는 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감시하는 국민감시자 일자리를
	활성화해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할 수 없을까?
정민수	극우 집단의 집회 및 마이크와 방송차가 일반인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가요?
최현식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면 왜 아직도 판매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박종욱	소방차, 119 구급차 사이렌 울리면서 출동할때 협조하지 않는 운전자들등으로 인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법적으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봉식	수많은 판례와 모든 법을 학습한 정부행정 생성형 AI가 있다면, 엄청난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준서	행정부가 관여된 내란범죄 등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장이 대행을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일반적인 권한대행 서열의 요건과 내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준서	대국민 배심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도입하면 법관,수사관들이 법률에 입각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진평규	AI 판사를 적극 도입하여 대법관에 과도하게 집중된 업무도 해결하고 국민정서와 반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점차 변화 시켜나가야 하지않을까요?
최준호	법의 빈틈을 없애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남궁호	AI 기반 판결 시스템 도입과 공정성 향상 방안은?
이강주	체포적부심 제도 개선을 위해 제안합니다
이원홍	테러방지법은 장난으로 만든겁니까?
박영준	검사와 판사의 재판을 의무적으로 국민배심원제로 할 수 없나요?
성수아	우리나라의 경우 배심원제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성규	지방법원에서 경범죄로 즉결심판 선고 이후 부과된 벌금은 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국고로 귀속 되야 하지 않는지요?
성수아	우리나라 법에 구멍이 많은 걸까요?
법률가 차병직	국민들이 왜 헌법을 공부해야합니까? 개헌, 진짜 필요합니까?
방건	무엇을 위해, 왜 우리나라가 왜 부강해 져야 할까요? 그리고 이 가치를 어떻게 헌법 전문과 헌법에 그리고 법률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가치를 어떻게 일상생활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김준배	개헌을 논의 할시점이 분명히 올것이 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화향	미성년자의 범죄 피해보상은 보호자가 해야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강무영	헌법 개정 시 "특별재판부" 설치 근거를 만들어야 할 듯 합니다.
강무영	민법. 법적 상속인 대상자 범위 축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익재	입법 경찰, 입법 기소관, 판사 직권조사 등의 기능을 만들 수 없을까요?
이정우	검사와 판사를 신뢰할 수 없는 시대, AI로 사법체계를 변혁할 수 있을까요?
최기호	국가 위기상태를 방치하고, 간단한 헌법사안 조차 판단 못하는 불안하고 무능한 헌법재판소 체계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권희영	우리나라는 왜 배심원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나요?
김병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균형과 발전을 위해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수는 없을까요?
박상진	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헌법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청호	AI 판사는 왜 도입이 되어야 하는가?
전용완	공정한 법 집행과 수호를 위한 검찰과 법원에 AI도입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강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의 문장 표현 명확화에 관해 제안합니다.
서승모	역사 깊은 야구도 볼판정 ABS 시스템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법원판결도 ai로 하는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이성우	헌법재판관 국회여야 합의시 임명될 수 있도록 입법해주세요.

법조인의 역할과 자격

문정	전관예우가 왜 있는거죠?
박락현	개개인판사의 성향 반영 되는 재판에 대한 보완방안은 무엇인가요?
박기표	판사의 판결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왜 상이한가요? 왜 상식에 벗어나는 판결을 해도 대응 할 방법이 없나요?
권순학	대법관, 헌재재판관은 선출직으로 하거나 자기가 판결한 반영한 현행체제에서 국민몫 3인 추천제 증원은 어떨까?
설문걸	인성, 도덕성이 아닌 그저 법조문, 판례 잘 암기한 사람들이 왜 다른 이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다 내리게 되는거죠?
김종남	시험 잘 본 것 외에 판사와 검사가 가진 권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김준석	판,검사도 잘못된 판결을 하면 직을 잃거나 해야하지 않을까요?

정명래	전관예우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판/검사의 변호사개업을 금지시키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김영환	시험으로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방기인	현재 법관과 검사 임명에 대한 제도의 변경 필요성
김영호	왜 검사, 판사, 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근거한 선출직 공무원 출마 제한이 없나요?
김종진	행정과 사법부의 고위직 공무원을 투표로 선출하면 안되나?
박재홍	왜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을 졸업해야 하나요?
황인용	판사 검사 변호사는 업무 성격이 다른데 왜 같이 뽑을까요? 특히 변호사는 민간인인데 왜 국가에서 뽑을까요? 참으로 이상해요
신민호	수구판사만 배출하는 현행 판사 임용제도가 옳은가?
김영호	왜 법원주관 전국민 공개경쟁채용 판사임용시험, 법무부주관 전국민 공개경쟁채용 검사임용시험, 인사혁신처와 변호사협회공동주관
	전국민공개경쟁 변호사임용시험제도를 당장 안 만드나요?
김영호	왜 법무부주관 전국민 공개경쟁채용 검사시험을 당장 안 만드나요?
김영호	왜 법원주관 전국민 공개경쟁채용 판사시험을 당장 안 만드나요?
김영호	왜 인사혁신처와 변호사협회 공동주관 전국민 공개경쟁채용 변호사시험을 당장 안 만드나요?
김영호	왜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수괴 윤석렬의 변호인 변호사들은 실력이 형편없게 보이나요?
김영호	왜 전현직 판사,검사들의 변호사면허허용금지법을 당장 안 만드나요?
김영호	왜 검사 판사 변호사면허 자동취득을 폐지하지 않나요?
김영호	왜 검사, 판사들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금지법을 당장 안 만드나요?
김민영	전관예우는 없어질 수 있을까?
김윤규	사법고시 부활 시키고 변호사 시험과 분리할 수 없나요?
홍세민	전관예우는 정말 필요한가요?
안재훈	우리나라는 왜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최종 판결을 하나요?
이지연	법률가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왜 법률지식을 장황하게 나열해서 핵심 쟁점 파악을 어렵게 할까요?
여경희	전관예우는 왜 해주는 겁니까?
최재호	현 검사 또는 판사가 퇴직후 변호사자격 금지법 만들수 있나요?
박헌규	왜 법조인은 로스쿨을 나와야만 될 수 있을까요?
김희숙	변호사도 공무원 법을 적용시키면 안되나요?
주재민	국민을 죄인으로 만드는 위헌적 변호사법 위반개정
황영연	전관예우가 법치주의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김승환	법조인 선발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현준	지금까지 왜 법원장을 선거로 선출하지 않았을까요?
정덕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 조치 안하면 탄핵해야 되지 않나요?
한승협	판사가 위법한 판결을 내리면, 범법한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할까?
노청호	판사가 국민을 위하지 않고 사욕을 위해 판결을 왜 남발 하는가?
정종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판사나 검사는 퇴직후 5년 이내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요?
채종대	도덕성도 제대로 평가 되지 않은 성적순으로 판사를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제로 변경 해야하지 않나요?
박정원	법원 판사의 판결에 대한 검증과 인사고과시스템이 있나요?
김기현	판사가 판결하면 틀리고 잘못된 판결이라도 따라야만 하나요?
이몽용	카르텔 형성 배제를 위해 판사, 검사 중간 직급 이상을 선출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상수	고(변)시제도 및 로스쿨 폐지하고 7급 공채로 일원화하길 바랍니다.
이화향	부장검사급 이상 퇴직후 3~5년 변호사 개업금지 합시다
고정진	검찰, 변호사, 판사 이들에 대한 임용에 관해 의견드립니다.
정성호	판사자격과 임용에 대하여
고정진	헌법재판관 임명의 문제점 그리고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입니다.
남창명	대한민국도 고위급 검사 임명에 있어 선거를 통한 선출직 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김종수	판사임기 10년 보장 없애야 한다 1년마다 국민이 선출하게 하자
배윤상	로스쿨을 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사법시험과 같는 시험을 다시 시행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치

정흥민	적산재산 불하과정에서 배제된 한국민들이 침해된 권리는 무엇이고 그 보전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병현	무당들과 붙어서 간첩만드는 공작질하는 정보기관원들은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조사를 시작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당하는 일들을 조사하고 기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글을 쓰는 동안 계속 방해하니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맥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편집 될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과 폰은 해킹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말하면이상한놈미친놈안하면고립돼당하는구조
이재우	계엄군이 국회를 정전시켰을 때 국회에서 계엄해제위한 방법 대비
김병석	판사 검사 의사 등 특수직종의 숫자는 왜 제한을 두어야 합니까?
김영호	왜 강력범죄를 저지른 고위공무원들을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풀어주나요?
김영호	왜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수괴 및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금지법을 안 만드나요?
김정식	간첩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와 민주당의 입장이 뭔가요??
김영호	왜 국가반란 외환유치 내란수괴 윤석렬은 헌법재판소에서 죄수복에 포승줄 수갑 등을 안 채우나요?
문정구	이번 내란에 동참한 모든 인원을 엄벌할 수 있나요?
김정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서우경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법 같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이해관계 충돌 관련 더 강력하고도
	효력있는 법이 필요하지 않나요?
김영호	왜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에 대한 항명 사표에 대한 구제법이 없나요?
김덕섭	친일파 등용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김영관	친일, 독재 미화 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황종락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재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내도록 하면 어떨까요?
최현진	친일, 내란 세력을 이땅에서 힘을 못쓰게 (박멸)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할수 없나요?
이홍기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을 왜 살려 두나요?
권재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권력자의 독단과 헌법 위반으로 후퇴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준모	국가 공무원 국회 탄핵후 헌재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선출 권력이 탄핵한것을 왜? 임명 공무원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김인숙	선거법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면 어떨까요?
김영아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을 막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기호	계엄령법이 친위쿠데타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닐까?
박지수	국회법 표결 무기명 투표가 왜 필요한가요?
양동원	지난 반민특위처럼 실패하지 않고 내란 특위로 모두 청산 할수 있는 방법은??
오윤수	다시는 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박철견	형소법 110조 111조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책임자 마음대로 영장집행 거부하는 거 손 좀 보면 안되나요?
주진택	국가가 양성한 블랙요원을 사사로이 이용하는 권력자들을 엄벌하는 법은 없나요?
이예승	왜 민주당은 간첩법을 반대하는걸까요?
강민석	내란(쿠데타)의 부역자들을 강력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기선우	반민족 특별법이 정권교체후 1호법안 되야 하지 않을까요?
이태건	검찰은 왜 경호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가?
조준상	내란범 처벌은 누구나 가능한가?
안상은	선거법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윤계협	내란범 (주요종사자 포함) 사면이 없이 형을 살아야 한다.
정진태	검찰에게 즉시 보통항고를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김진태	검찰 심우정 총장 최고의 범죄자와 동일 죄를 적용해야!
정동하	법원의 내란죄 심판은 믿을 수 있나요?
강대삼	헌법 재판관님에게 호소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인용을 결정할 수는 없을까요?

생활치안

김삼수	난청 장애인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김영열	사이비 종교, 왜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을까?
이주성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준수 시간 조정필요
김정아	지자체 등록된 반려동물에게 동물등록번호 나오고 종 나이 개체수에 따라 의료보험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임준영	자동차에 살짝 부딪혔는데 입원까지 하고, 자동차 수리비를 과다 청구 합니다. 개선 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현숙	중대재해법에 대해 누가 만들고 결정했는가?
김영호	왜 내란반란범에게도 명예훼손죄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나요?
이영철	왜 우리나라는 실내라돈 농도 규제 입법화를 하지 않는가?
김지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미접수자가 접수, 심의 할수있도록 법률안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서성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왜 죄가 되나요?
이성규	농지법 개정안 중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한다고 발의되어 있는데 시행은 언제쯤 되는가요?
김영호	왜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수괴들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권을 부여 하나요?
김병수	혐오발언도 표현의 자유일까요?
김서유	놀이를 위해 타생명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이제 금지하면 안됩니까?
민동우	강성범씨를 무려 17년 전에 개그를 문제 삼아 민주 유튜브 진행자에서 자른 것이 맞습니까?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형법화 하는 것은 어떨까요?
흥정화	개 5마리를 키우던 사람은 왜 갑자기 개들을 집밖으로 내쫓았을까요?
이강주	단순교통사고를 경찰에서 조사하는 이유는?
CHOI HOUN JIN	간통법은 정말 필요 없나요?
남정화	강아지 고양이 공장은 왜 존재해야 하나요?
최만석	누더기 종교인 과세법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신한솔	교통법은 언제 바뀌나요?
정아영	왜 법무부는 동물학대강제소유권박탈을 반대할까요?
신창조	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처벌되나요?
유민정	동물 판매업을 아예 금지할 수 있을까요?
정경진	공익적 목적의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영주	안전관련 법이 강화되어도 안전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화정	동물보호법 강화 가능할까요?
이성철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함인호	예수 안 믿는 기독교 목사, 사기 죄로 처벌 가능한가?
지완진	22대 국회 계류중인 「제조물 책임법」 적극적인 검토 및 입안을 건의합니다.

헌법

김도연	검찰총장.대법원장.검사장.헌법재판관을 국민투표로 뽑아야되지않을까요?
양성중	5천만명이 투표해서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왜 9명의 헌법재판관이 최종 결정하는가?
이정현	헌법재판소는 국회 추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견재할 방법을 가지고 있나?
김규식	피켓 문구를 윤석열 탄핵 대신 윤석열 헌법위반으로 할 수 없을까요?
정의철	헌법재판관 후보제를 도입해서 재판관 공백이 없게 해야하지 않나요?
박성남	헌법전문에 나오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말들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안에 대해 폄하하는 말들을 공공연히 할 수 없게 반나치법
	같은 법 제정을 할 수 있을까요?
김봉조	국민의 인권은 이제 어디에서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최창림	대통령 탄핵 인용을 왜 헌법 재판관들이 심리 해야되나요?
김수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법관들은 국민투표로 선출하면 안돼나요?
최대식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대책 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종술	헌법재판관 정족수 미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파면 할수있나요?
박정원	헌법재판관들 중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만 증인에게 질문하는데 이 세분만 질문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건가요?
정덕수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책 특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궁금하신가요?
박진형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를 독일에 연방헌법재판소와 같이 9인에서 16인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수호만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상직	믿음을 배신한 나의 나라, 검찰과 판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믿었던 헌법재판소까지 삶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원홍	법치국가는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황성일	헌법재판소, 향후 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주송	헌법재판소의 국회(국민) 무시 해결 방법은?
김후영	윤석열 탄핵국면에서 드러난 대통령 탄핵제도와 헌법, 헌법재판소법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은?
김연중	헌법재판소는 해산해야 합니다.
정재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당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해야 하는지요
김종수	헌재 해체 해야한다
박정호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앞둔 피의자를 만나도 되는가?
김해인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뽑고 해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과 입시
교육제도

임현아	저는 메타버스 개발 & 강의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이 왜이렇게 변함이 없는지
박진현	왜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수십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건가요?
남영주	우리나라 교육 이대로 괜찮나요? 선행이라는 것 없이 공정하게 시험을 볼 수는 없나요?
강수경	학교의 다양한 업무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류상연	대한민국 사교육은 못 없애나요?
윤여경	우리 아이들은 교육 정책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계속 바뀌어야 하는걸까요??
송필종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교육은 이미 뒤처지는 방식이 아닐까?
김은정	학교에서의 공부보다 사교육 시키기가 목표가 된 학부모
김지연	우리나라 교육은 왜 경쟁만 심하고 사교육에 의존해야 할까요?
임은하	사교육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현 상황에서 공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주진혁	왜 아이들은 학원의 수익을 위해 하루 종일 학원에 있어야 하는가?
조미정	사교육이 필요없는 양질의 공교육, 가능할까요?
최관일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 금지하면 안 될까요?
조호규	유초중등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비꾸자
조호규	학폭법을 이대로 두고 교육을 말할 수 있을까?(학교 폭력에 교육 개입의 여지를 허(許)하라)
정현선	현재의 경쟁중심 입시로는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키울수 없습니다. 입시제도 개혁은 중등교육 개혁이 먼저일까요 대학교육 개혁이 먼저일까요?
김동욱	AI 세대에서의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민경구	AI 시대에 필요한 사유 능력을 기르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선호	사교육 금지 해 주세요..(출산율 증가 , 사회적 격차 해소 , 공교육 질 개선 등)
추미화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꿔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이동희	기존의 학교 시스템을 없애고 사이버 학점제를 통한 새로운 교육 체계를 제안한다.
임승현	교육의 불평등 해결이 될까?
이민경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왜 또 학원을 가야하나요? 공교육 질을 높여주세요
최규진	공교육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고 돈 없는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임휘진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게 행해지는 조치는 적절한가?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사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인가?
강연주	왜 우리는 학폭, 일진, 일베, 왕따 등등이 판을 칠까요?
윤관영	EBS 시스템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국의 학원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장문규	공교육은 언제 정상화 될 것이고 사교육을 언제까지 방치 할 건가요?
유경아	교사와 학부모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디지털교과서를 교육부가 강제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성희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뀌면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학원 공화국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이승훈	현시점 학부모 국민이 바라는 교사의 과업 시간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국민은 교사가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는가?)
성상준	새로운 기술과 세계관이 변한 세상속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미래들이 기성세대의 무관심속에 버려진 20세기 교육으로 그들이 살 세상을 비전을
	갖지 못하고 살 도록 하실건가요?
최성호	긴 호흡으로 교육 정책을 다듬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김은정	왜 생활기록부는 사실대로 쓸 수 없나요?
이경희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개선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윤찬삼	교육? 내란 폭동 양성 아닐까?
박찬영	성적 꼴지하면 인문계고등학교를 왜 갈 수 없죠?
이현규	학원 뺑뺑이, 이젠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강상효	초등학교 사교육비좀 줄여 주세요
임현재	왜 우리 공교육은 여전히 수능이 목표일까요?
박정운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등을 없애기 위해서
조혜인	사교육비는 왜 점점 늘어나는 것일까요?
김사원	어떻게 교육을 해야 ai 시대에서 공동체 중심의 협력이 강화가 될까요?
황종락	서울대학교 법대까지 니왔는데 왜 윤석열같은 사람이 나올까요?
김경성	왜 '그 사람'이 교장선생님이 되는 건가요? (당신이 모르는 우리 교육의 민낯...)
이상무	히딩크 감독처럼 교육장관을 북유럽쪽에서 초빙하면 어떨까요?
이정석	한국 교육 시스템, 학벌, 사교육, 그리고 공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설원경	우리 시대는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으로 멈춰있는 걸까요?
손은경	왜 꼭 학원을 가야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될까요?
김기웅	47살. 난 언제쯤 식구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될수 있을까요? (교육)
김효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시스템을 체크리스트 형식의 간편하고 시각적으로 바꿀 수 없을까?
김상용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요?
박상민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선미영	인구절벽을 대비한 교육정책이 보다 혁신적일 수 없을까요?
김종인	우리나라의 교육, 특히 입시에 대한 부분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변했습니까? 그게 바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동원	왜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배워가지 않으면 안되는걸까요?

안경훈	현재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은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오정아	공교육 정상화는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오정아	AI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바뀔까요?
김효중	대한민국 사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곽민제	공교육 문제, 이제 공론화의 장으로!
장은정	고교학점제 교사 생기부 기록 부담을 줄일 수 없나요?
하미선	학폭 피해자가 원할시 학폭 가해자를 왜 분리배정 못시키나요?
김병윤	어떻게 해야 학교 폭력을 줄이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박현종	김누리 중앙대 교수님등 교육 전문가들을 정책에 참여시켜 우리나라 학생들을 구하자?
유석환	왜 공교육은 정상화가 안 되는 걸까요?
이인사	초등학교의 생활기록부가 필요한가요?
오민영	우리나라 공교육은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일까요?
박정식	학교의 정상화가 진짜 가능할까요?
홍종화	K-서당 어떻케 생각하세요? AI시대의 교육은 어떻케 변해야 하나요? (10년후 20년후 30년후 50년후 교육제도를 지금 그려야 하지 않을끼요?)
한신	왜 주4일 근무를 주장하면서 청소년들은 토요일, 일요일 포함 주7일을 학원에 다녀야 합니까?
이정민	군사법원 가정법원도 있는데 교육법원은 왜 없나요??
김경성	(교육)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가르쳐야 하나요?
최윤식	왜 우리 아이들끼리 경쟁시켜서 줄 세우는 교육을 바꾸지 못할까요?
노연수	학원을 꼭 가야 하나요?
이영희	초등 6년+중등 6년(중 3년 + 고등 3년) 교육체제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요?
오명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나요?
오세규	교육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국가경쟁력 vs 개인의 행복? 아니면 둘다 동시에?
김희은	우리는 AI시대에 교육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진균	수능제도 개혁 및 폐지는 불가능한가요?
김형근	논술채점 AI, 객관식 찍기교육을 끝장낼 수 있을까?
진보라	대학입시변화가 없으면 공교육강화로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김학귀	교육혁명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입시제도 폐지'를 합시다. 인간 중심의 공교육 변화가 필요합니다.
남궁호	대학 내 내부 신고자 보호 및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은?
orangey1004	인공지능의 시대, 불안한 현실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억만장자-m5z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한가?
신동현	왜, ICT 기반을 활용하여 수학/과학/기술 과목을 초중고 부터 영문교재를 사용하여 가르치는 교육혁명을 시행하지 못하는 건가요?
안세민	AI혁명 시대에서 사교육은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필요할까?
이소라	중딩 질문모음 입니다
양희진	유아나 초등 저학년이 오후 늦게까지 학원, 돌봄.. 아동학대 아닐까요?
이유	학생들의 학습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은경	허술하게 진행되는 교육청의 학폭위제도를 검토해 주세요!
이선희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왜 또 같은 공부를 하러 학원에 가야하나요?
김동직	현 시대에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박인수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승복	왜 우리는 영유아의 학원 교습을 금지하면 안 되나요?
최승복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은 학원과 학교의 휴업을 법제화하면 안되나요?
이대옥	이제라도 교육제도의 변화는 가능할까요?
최소정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괜찮은가?
우수경	선행학습 금지를 전폭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수경	교과서 대신 단행본으로 학습할 수 없나요?
안재훈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수경	학교에서 한 반의 적정 학생수와 교사 수급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최정길	갈수록 지능화돼는 청소년범죄와 학교폭력 줄일수는 없을까요?
진인호	대한민국 교육제도를 혁신할 수 있을까요?
박영은	우리나라 교육은 누가 책임 지나요?
이을기	대부분의 학생과 부모를 불행하게 만드는 한국 교육, 혁명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이대웅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과목별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은 역차별이 아닐까?
최강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사교육을 금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김기정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언제까지 하루 12시간 이상을 공부해야 할까요?
조기식	독일식 교육 제도 모델을 연구하여 도입하자
유현석	인구가 줄어도 교사수는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
권경훈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받고 있는가?
전춘영	진짜 교육을 하고 싶은 교사는 공교육과 사교육 중 어느 분야로 가야 할까요?
임진성	아이들, 혹은 조중고 학생들의 정보의 접근 기회가 균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정현	학교폭력 조사를 선생님들이 해야하나요?
박창영	한국의 교육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한나영	AI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정책, 이대로 괜찮은건가요?
김성래	윤석열 정권에서 싹튼 민주주의의 적 파시즘의 뿌리를 없애고 대한민국 민주헌정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하나?
SHANE HORNSBY	선행학습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하는가?
SHANE HORNSBY	한국 교육에서 신자유주의적 접근 방식이 남긴 폐해는?
SHANE HORNSBY	신자유주의적 접근 방식의 교육 불균형 해소 정책은?
황도경	우리 중학교 아이들은 왜 수학학원에 다녀야하며, 왜 매일 수십장씩의 수학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학교가 정상화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박경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경쟁력을 위한 역량을 갖기 위해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이대희	질높은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황성일	지금 사회적 문제 대부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의 문제는 언제 개혁할 겁니까?

백형진	공교육 교사는 왜 교육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까요? + 왜 공교육 교사집단은 교육전문가로 거듭나지 못할까요?
황종락	학교 폭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민환	왜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보내야 하는가?
박현희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박성원	대학 사회는 사회의 이상적 모델인가? 개혁의 대상인가?
도완영	AI에 학습시킬 학습자료를 긴 우리 역사에서 찾으면 어떨까요?
성원석	대한민국은 의무교육을 마친 아이들이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지 궁금합니다.
박찬식	저출생, 빈부격차, 소비 위축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와 사교육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김두봉	대한민국 현재의 교육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해야 하지 않을까요 ?
강덕화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은지	AI시대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요?
오정근	선행학습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은 없을까?
오승아	사교육 강사들을 공교육강사로 정식 흡수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문명렬	대한민국의 교육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박종배	학교폭력의 희생자들을 에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장혁	왜 (SKY급) 명문대를 (지방에) 여럿 만들지 않나요? 필요 재정 연 5조, 연 사교육비 27조.. 대학개혁으로 지방활성화, 공교육정상화, 행복한 아이들
김영범	학교가 안전해질려면?
김현호	인문학이나 순수자연과학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아람	다시 씁니다. 중학교 졸업이 의무교육이라는데. 왕따를 당해서 정신적 충격때문에 거의 결석을 하고등교거부를 표시하는데 이 의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경준	교육 개혁은 원하시나요? 창의적 인재를 찾는다구요?
김새롬	교육정책은 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걸까? 교육정책 형성, 평가 시 왜 학생, 교사, 학부모,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을까?
김새롬	대선용 교육 공약이 왜 이렇게 부실할까? 교육부 장관에 왜 교육에 정통한 사람이 임명되지 않을까? 사회정책과 교육정책이 서로 맞물리도록 할 수 없을까?
김새롬	교육부는 자신은 공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왜 일선 학교에만 공문서를 공개하라고 하는가?
김새롬	교장들은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할까? 교장들이 모여서 중의를 모은 다음,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는 프로세스가 있을까?
이명재	파시즘 교육 멈출 수 있나요?
양희진	기저귀 차고 4세 고시 보는 아이들, 자라서 윤석열처럼 되면 어쩌죠?
윤연정	공교육은 7세와 1학년 아이들에게 왜 한글을 가르치지 않나요?
이진순	학생들이 AI를 사용하는 데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박명미	의심하고 질문하는 답을 찾고 수정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학교 교육
최승원	교사들의 정치 참여권 보장과 교육현장 입시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설원경	지금의 학교교육이 사회를 이끌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학교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박중근	사교육에 의한 교육 빈부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황정희	미래대한민국을 위해선 공교육의 강화가 꼭필요합니다
박계순	교육부터 개혁이 필요합니다. 서울대부터 없애야 합니다.
황종락	학교폭력조사관 제도 이래도 좋은가?
박희정	우리나라는 왜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최미희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직접민주주의로 하면 어떨까?
신홍섭	대한민국의 교육개혁 우리의 절대적 과제 언제 완성시킬 것인가?
김혜진	학교에서의 학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방관자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권 강화를 위해 뒷자리에서도 잘 들리도록 스피커 설치 왜 안할까요?
윤연정	대한민국 대학생은 학생인가요, 고객인가요?

시민교육

이혜수	의무 교육에 시민교육 인성교육을 포함할 수 없나요?
최윤성	헌법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김경혜	중학생 학급에서 남녀 차별? 어떻게 차근차근 준비해야할까요?
김도연	철학이나 인문학을 정규과목으로 채택 안 될까요?
송필종	왜 우리는 학교에서 돈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나요?
김정아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공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할까요?
장미향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김주선	모든 아이들이 A를 받아 성적이 좋은 공부 잘 하는 아이가 되어야만 할까요?
정경학	창의력과 리더십을 갖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최가라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권리와 의무가 뭘까요?
박영신	아이들이 다음세상의 답을 왜 학원에서 찾게 하나요?
석진우	국영수교육보다 금융교육&시민권리 교육비중이 늘어나면 안되나요?
오기석	종교인과 교육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그냥 둬도 되나요?
최명렬	초등4학년부터 헌법과 금융 교육을 실시합시다. 참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최소정	한국 성교육은 정말 괜찮은 것인가?
박현순	학교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양성인가요? 그러면 정규교육과정에 토론과 질문을 통해 논의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배워야하지않을까요?
정유경	공교육은 왜 경제와 사회현안등을 교육하지않는가.?
김준호	왜 초중고등 교육에서 헌법과 기본 법률 그리고 세금과 투자(경제 주식 부동산)등을 가르치지 않는지요?
정붕재	초중고 교육 시스템 나름 훌륭합니다. 딱 2가지만 개선하면 안될까요?
오세윤	헌법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넣을 수 있을까요?
오세윤	성인이 된 이후에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김태상	등록 대안교육기관 졸업생 학력인정이 왜 안되나요?
김철영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환경은 아이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황정자	민주제에 대한 교육 필요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김희영	건강한 시민양성을 공교육이 할 수 있나?

주지훈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나라의 교육 혜택을 받을 수는 없나요?
이승원	왜 우리 사회의 배움은 한시적이고 집약적 성격을 띠고 있을까요?
홍점표	대한민국에서 근로기준법 교육을 왜 시키지 않을까요?
안학수	초등학생때부터 헌법을 포함한 기본적 법률을 가르쳐 주세요.
권기영	평등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교육제도를 만들수는 없을 까 ?
손지연	성적이 아닌 생각하는 배움. 진짜 교육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병일	교육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교육은 언제쯤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이동근	철학, 문화, 예술을 통한 윤리적인 내용의 의무 교육과 한국의 입시와 대학 이후의 교육은 어째서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는가.
최준호	사이비 종교의 포교 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실시
서은지	학교에서 정치교육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오연경	공교육에서의 성교육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김경오	철학이 공교육에서 체계화 될 수 있는가
김한웅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해 줄세우기를 그만할 수는 없을까?
박찬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안전교육이 정말로 변화한 걸까요?
이성훈	대한민국의 교육은 주권자로서 주인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습니까?
오명교	학생 개개인은 모두 다른 방법으로 배우는데, 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하나의 방법으로만 학생을 가르치죠?
오명교	개인의 학습 속도는 개인마다 모두 다른데, 왜 우리는 같은 시간을 들여서 학교를 다녀야 하나요?
서영호	초등 교과과정에 헌법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했으면 합니다
김강완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은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학생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시간만 보내는 것은 아닌가?
임정은	학교는 왜 안전한 공간이 되지 못할까요?
김지용	정치학을 정식 교과로 채택하자.
고다원	의를 생각하고 의를 실천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
남궁호	교사가 학생들을 선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
김영수	공교육만이 아닌 다양한 교육을 고민하고 펼치는 사회는 불가능한가?
하성	인간을 인간으로 키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고정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과 금융 교육을 한국도 교과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민경	공부를 잘 하지 않는 아이들도 학교에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은?
송홍주	이제 민주시민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재만	고민하지 않고 달리는 교육 왜 가치있는 철학을 요구할까요?
이선희	초중고의 역사시간에 반민주세력과 반국가 세력에 대해 가르쳐야하지 않을까요?
유현석	앞으로 철학, 생각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게 교육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지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 이대로 괜찮을까요?
조용미	언제까지 학교에서 철학 없는 입시교육을 계속해야 할까요?
이응덕	(교육정책)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인문학>, <금융>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전진희	가치의 양극화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인문·사회 학문에대한 사회적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문지숙	건강한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김민진	참된 사람을 기르는 교육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가요?
윤연정	한국 아이들은 언제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고 논술할 수 있을까요?
김현화	공동체원으로 갖춰야 할 소양과 시대 정신 교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김소형	중고등학교에서 헌법과 기본적인 노동법을 교육하여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쌓고 사회에 나오도록 합시다.
이덕경	교육과정 및 평생학습에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도완영	노동 계약,경제 상식,미디어 미터러시 이건 어릴때 교육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사회의 쓴맛이니 가짜 뉴스에 속았다고 질타하는건 모두 당연히
	가리쳐야할걸 안가리친 것에 대한 변명 아닌가요?
김창현	민주시민교육을 정당에서 정례화 하자
eunyoungyoo7976	경쟁하는 교육구조 안에서 건강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어떤 양육이 필요할까요?
이혜진	우리 사회의 공교육에 '선거에 대한 교육'이 있나요?
동만덕	종교를 가지는 시기를 19세이상 부터 과학의 진리를 이해하눈 시기부터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이삭	왜 우리는 초중고 철학교육을 시키지 않을까?
김훈태	왜 인간교육인데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나요?
유재왕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헌법' 과목이 있으면 안돼나요?
이현희	공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민주공화제 시민교육을 필수교과로 확산해 주세요
하태환	살인적인 경쟁 교육을 깨고 어떻게 협력하는 시민들을 양성할까?
이상훈	청소년에게 철학 및 정치 교육을 실시하자
권성하	청소년 시기 아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 도입이 필요합니다.
추연규	학생들에게 헌법 교육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임강호	우매한 대중을 길러내는 한국 공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고등 교육

장미	고등교육이 필수처럼 되어버렸는데 개선방안은 없을까요
이민석	대학입시를 추첨제로 해도 되지 않을까?
홍재성	우리나라에서는 왜 노벨상 필드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신새봄	백세 시대 오래 잘 살려면 석사 과정을 새롭게 공부해야 할까요?
팽주현	왜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경쟁력 또는 학교 교육의 질은 의대 합격자 수로 판가름 되어야 하는가?
김도연	독일처럼 대학평준화가 필요합니다.
배현미	명문대를 졸업해야만 인정받는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서문선	줄세우기식 입시제도 하에서 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한가?
한진희	대학원생은 학생이 맞나요?
심규한	sky 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고 차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형아	왜 대학을 꼭 가야하나요?
윤성웅	고교상대평가가 우리나라 능력주의(meritocracy)의 자양분이 아닐까?

현경산	왜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장대흥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은 의대를 가는 걸까?
설재록	왜 대학의 교수 대부분은 유학한 사람들인가요? 그러려면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은 왜 뽑나요?
김승주	우리나라 대학은 정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이상엽	서울에 있는 대학을 전부 지방으로 분산 이전 하면 어떨까요?
최정환	공부 제일 잘 하는 사람이 판, 검사, 의사를 희망하는 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까요?
김선호	대학 입학 시험이 없어지면 더 많이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나요?
김재희	학교 석차가 세상을 살아가는 석차가 되는게 정당한가?
박진우	40~50년 동안 왜 경쟁체제 교육제도를 손도 못대고 이러고 있습니까?
명준서	언제까지 한국인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초중고 12년의 오징어게임을 계속해야 할까요?
강복용	왜 대학에 가는데 돈을 내고 가야 되지?
하성미	교육에 경쟁 입시 서열화를 없앨 수 있믄가?
이상헌	왜 주간 로스쿨만 존재하나요?
김수진	성적으로 줄세우기를 위한 교육을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리노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방법이 있을까요?
홍순길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장승환	왜 우리나라는 대학 서열제를 폐지하지 않는가요?
김경은	전국의 국립대학을 하나로 묶고 각각을 단과대학으로 편제시킬 수는 없나요?
이동희	서울소재 대학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시킵시다.
이동희	고등학교의 모든 서열화를 단호히 즉시 폐지하여야 합니다.
홍진숙	언제나 20대 초반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어른을 만날 때 대학생이냐는 질문을 안 받을 수 있나요?
김한빈	왜 대한민국 교육제도는 인문/사회 계열 대학원생을 방치하는가?
전진도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복지 정책으로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걸까요 ?
김희진	대학 입시 난이도를 완화하고 국립대, 지방대라도 서열을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이동희	특목고와 자사고 가점제를 폐지하고, 모두 본래 목적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게 체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김정환	현재의 주입식 서열화 교육이 미래세대에 얼마나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최광식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 대학 통합과 고른 육성 계획은 없나요?
김동직	대학교육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남궁호	한국의 대학을 프랑스처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통합하고, 1대학·2대학 체제로 개편하는 동시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대학은
	중앙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지용	대학 서열주의 문화는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을까?
우수경	학교 성적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허상을 버릴 수 없나요?
이동희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위해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를 없애 주세요.
WANGDAESIK	대학에 가지 않아도 대학 졸업자와 비슷한 초봉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SHANE HORNSBY	대학교육이 학벌에 의한 신분제 사회의 신분 결정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서 탈피할 수는 없는가?
이혜영	대학서열화때문에 반수,재수,n수생이 생깁니다.
임성현	대학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SHANE HORNSBY	대학 스스로 포기한 교육평가 시스템의 복원이 가능한 것인가?
SHANE HORNSBY	대학교육 품질보장체계를 새로이 혁신할 수 있는가?
김희정	한국 교육은 스카이 입학을 위한 과정으로 변질됐다
이명재	대학생이 수강신청이 어려워서 강의를 못 듣게 된다?
박준태	지방을 살리려면 지방 대학을 살려야하지 않을까?
김서연	대한민국에서는 전문대학교라도 꼭 졸업해야 합니다.
신문희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인구도 수도권에 모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왕대식	독일 교민 입장에서 보면 한국 문제의 핵심은 비정상적인 교육열입니다.
김예림	대학교는 왜 20살에 가나요?
심형섭	대학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연정	우리 아이들이 한우인가요?
김영환	대학 교육이 필요한가?
이상훈	우리도 독일처럼 대학제도를 개편하여 졸업을 어렵게 하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초봉을 대학졸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
지재우	대학을 가지않아도 괜찮은 세상은 어떨까요?
신홍섭	갈 길 잃은 고등 직업교육기관 전문대학 새로운 학위 모델로 혁신할 수 있는가?
신홍섭	교육품질관리를 하지 않는 대학교육으로 한국의 미래를 열수 있는가?
신홍섭	거리의 대학 한국형 마이크로 대학 설립으로 신 지식 생산 시스템은 가능한 가?
신홍섭	한국형 마이크로 대학 시대와 일자리 안전망의 교육복지 나눔의 시대는 가능한가?
신홍섭	기업은 대학의 인재양성에 더 이상의 무임승차를 중지해야 하지 않은가?
신홍섭	대한민국 교육혁명 신 지식 생산 시스템 한국형 마이크로 대학 설립으로 가능한가?
신홍섭	한국의 대학 서열과 학과 서열의 고질적 병폐 입시개혁으로 사라질까?

기본 교육

강석우	언제까지 국영수 교육만 하실 것인가요?
송홍주	의미를 잃어버린 아이들의 수학여행을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민주주의 역사 탐방으로 새롭게 구성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이종경	중학교 1학년 때 ABC를 처음 배웠고 지금까지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작년까지 약 12년 동안 영어를 가르쳐 왔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영어를 이딴 식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걸까요?
홍창효	우리 역사 기록은 모두 한자인데, 우리는 왜 한자교육을 포기했나요?
김영호	왜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국회법 및 대통령령으로 법을 만들지 못한 것일까요?
정철원	우리는 역사교육에 진정성이 있는가? 왜 역사가 영어나 수학보다 시험 점수 비중이 낮을까?
박동용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육까지 무상교육이 어렵나요 ?
김용	국공립 어린이집의 각종 공모 대회가 필요할까요?
노현택	조선총독부의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시각에서 기술한 '우리 역사'를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그대로 답습하여 왜 가르치고 배워야 하죠?

김혜진	세상은 점점 세분화되고 취학아동의 수도 줄어가는데, 공교육에서 외국어 교육과 평가방식은 왜 아직도 20세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초중고만 충실하게 다니면 수능영어 잘 치를 수 있나요? 언어는 인간이 모든 감각기관을 가지고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한데, 왜 수능을
	비롯한 공교육의 언어학습평가는 근대화 시기 독해와 문법이라는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걸까요?
이종경	한국의 영어교육 듣고 말하기 위주로 완전히 바꾸면 지금보다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김영호	왜 대학수능시험 수학,영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바꾸지를 않나요?
이용상	초등학교에서도 예체능과 영어를 전공 교사가 가르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승화	초등학교 수업에 왜 체육이 없을까요?
고진영	공교육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수 있는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근원	대학 입시 교과목은 왜 아직도 국,영,수 중심인가요?
임오남	모든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설치할수 없나요?
이기종	바른 역사, 식량 주권 교육을 초등 저학년부터 할 수 있는 정책, 진행되는 게 있는지요?
박승민	왜 우리리는 독립투사의 역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교육이 만연합니까?
김영태	대학교 무상교육 못하나요?
정윤아	일제시대때부터 내려온 영어 교과서는 언제 바뀔 것인가
홍창효	왜 우리는 친일 역사학자들이 왜곡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이윤경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능, 품행 등의 문제를 스크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김란희	초등교육의 본질은 교육인가 보육인가
이석남	한자 한문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석남	기본 의무교육 제도 근본부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영호	왜 당장 전국민 고등학교 의무교육법을 만들지 않나요?
홍대식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이 너무 등한시되거나 왜곡된 역사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역사교육을 어떻게 바로 세울수 있을까요?
김외규	왜 초등학교는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있나요?
이경미	이젠 역사교과서에 대해 독립적인 규제가 필요할 때 아닐까요?
김승배	초등학교는 왜 아이들을 직장인 퇴근시간보다 일찍 하교 시킵니까?
박병일	국립고등교육기관(서울대학교 등) 교육비(입학금, 등록금)을 무료로 왜 하지 않을까요?
안상학	우리는 근현대사 교육을 하지않는가?
김세련	초중고 교육안에 공동체의식, 올바른 역사인식과 교훈, 직업소명, 그리고 민주주의 교육 점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미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아동 대 교사 비율,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미영	고교 무상 교육 폐지 소식에 아이 친구들이 자퇴를 고민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윤	국민을 위한 교육은 나라에서 책임집시다.
김다솔	예비 고 2 학생의 질문입니다. 분단 70년, 학생들의 통일, 분단에 관심이 없어지는것과 북한과의 통일을 반대하는 학생들 비율의 증가하는것,
	북한의 계속 되는 실험과 도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이서	토익은 왜 모든 시험에 들어가 있습니까?
유현석	전국민이 악기를 하나씩 다룰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하수환	왜 우리는 역사 교육에 대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가?
윤연정	영어 받아쓰기를 더 잘 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왜 안타까워하지 않나요?
SHANE HORNSBY	대학교육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미래사회를 위한 성숙한 시민으로 길러내고 있는 가?
박경석	국가적으로 100여년간 영어교육을 해왔고 개인적으로 십수년간 영어공부를 해왔으나 우리국민 대부분은 왜? 하고싶은 우리말을 영어로 말을 못합니까요?
김세진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박정희	모든 학교에 수영장을 설치할 수는 없는 겁니까?
김양민	초등학교 지하로 등교 안되나요?
김예림	왜 초등학생은 6학년까지 밖에 없어요?
김덕주	독립운동사를 별개로 교육합시다.
최준호	대학 무상교육은 언제쯤 실현 가능할까요?
오재홍	어릴 때부터 팀 스포츠를 교육한다면 팀웍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영	수능 영어 시험에서 쉬운 일상 대화가 가능한지만 보면 어떨까?
홍남식	이재명 대통령님 우리집에 딸이 셋입니다. 경산집이고요. 2째딸 고등학교 올해 들어갔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 부탁 드립니다.
김새롬	학교에서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체육 수업을 하도록 하면 안 될까?
박용성	역사교육 헌법교육 위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김현명	국사교육을 현재로부터 과거순으로 하면 안되나요
김원배	유보통합보다 공립 유치원 확대가 먼저 아닌가요?
윤연정	초등학교에 한글/국어 전담 교사를 만들어 주세요
김광철	초등학교 부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한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수	현대사 교육을 넓고 깊게 해야합니다.

입시제도

이민석	학교에서 우리는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언제까지 계속 해야할까요?
김영훈	고작 중학교, 고등학교때 성적으로 일생을 결정한다는게 맞는 것인가? 현재의 공교육과 사교육은 왜 이렇게 아이들을 괴롭히는가?
김성빈	왜 수능이라는 단일 평가 기준에 젊은이들을 몰아넣는가?
이지환	서울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왜 반민주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생각이 없는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강영은	수학능력시험을 우리는 왜 폐지하지 못하는가?
김은숙	세상은 미래 교육을 말하는데 왜 학교는 입시 교육만 하는걸까?
유해선	경쟁교육에서 아이를 구해주세요
이해인	왜 우리 아이들은 출산률이 절벽인데도 교육 경쟁은 더더 치열해지는걸까요?
김미선	왜 유아기때부터 입시준비로 우울해야합니까?
김보성	왜 아이들은 삶을 위한 공부가 아닌 대학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건가요?
최윤지	'순종적인 노동자 생산'을 위한 '수능', 이러한 한국 교육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희진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왜 나의 대학 입시에 도구가 되어야 하나요?
황종락	서울대학교 법대까지 니왔는데 왜 윤석열같은 사람이 나올까요?
이혜진	언제까지 '서울대 공화국'에서 살아야 합니까?

김미경	입시 경쟁을 해야하나요?
강병주	우리는 왜 계속 경쟁 입시 교육을 해야하는가?
유지안	대한민국 교육은 왜 대학입시에 맞춰져 있는가?
이기쁨	경쟁교육은 실효성을 다한거 아닌가요?
김재욱	재수, 삼수, N수생을 계속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orangey1004	우리 사회는 왜 성적 위주의 입시 정책을 버리지 못하는가?
김영환-g1e6u	공동체를 파괴하는 경쟁교육. 어떻게 치울것인가?
eeefff4596	내란수괴와 가담자 출신 서울대 육군사관학교 경찰대 폐교해야 합니다
홍순근	국공립 서울 대학교 이제는 폐교해야 하지 않나요??
박종일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전국민 무한 경쟁,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할까요?
윤연정	우리들 삶의 최종 목표가 대학입시 아닌 꿈일 순 없나요?
임수현	한국은 교육은 이대로 괜찮은가? 경쟁적인 입시제도에서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과 입시로 변화할 수 없는가?
신승한	정답만 찾도록 교육하는 입시제도. 이대로 괜찮을까요?
변수정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입시지옥에서 해방되는 나라.. 만들 수 있을까요?
전영희	우리는 왜 경쟁교육시스템을 고수하는가?
김재원	우리 아이들 언제까지 어릴 때부터 전쟁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교육제도입시제도7세고시
SHANE HORNSBY	현행 정부 주도의 성적만의 변별력을 위주로 선발하는 대학입시제도를 방치할 것인가?
SHANE HORNSBY	학생 본인의 노력이 아닌 결과를 대학 입시 선발 과정에서 걸러내는 장치는 없는가?
SHANE HORNSBY	대학은 가짜 인재를 걸러내는 특별한 입시정책을 제시할 수는 없는가?
SHANE HORNSBY	신자유주의의 산물 '입시지옥' 그 탈출구는?
SHANE HORNSBY	신자유주의가 대학교육과 대학입시에 미치는 악영향은?
SHANE HORNSBY	상급학교 진학만을 위한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위헌이다
박종환	서울대를 해체하라
문지용	서울대 내란 법과, 육군사관학교, 경찰대학교 등등 국가가 책임지는 대학교에서 쓰레기들이 나오는지?
남경옥	대한민국의 교육이 극심한 경쟁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세현	우리는 왜 아직도 수능에만 올인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나요?
배윤상	수능 접수를 인터넷 접수로 바꿔주세요!!
윤성원	입시로 변질된 교육을 바른 인간을 키우는 교육으로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훈	대학 입시를 쓸데 없는 경쟁제도에서 바꿀 수 있을까?
박정현	입시 지옥 그대로 둘 것인가 ? 교육 혁명이 필요하다 !
조원향	수능 이대로 계속해야 하나요?
노균환	수능 체제 개편, 문제 있습니다.
이형언	의대 입학생을 꼭 학부 통합해서 뽑아야 합니까?
설원경	수능시험 난이도 이대로 가야하나요?
우광호	시험 한번에 평생 직업이 맞을까요?
reginalee8175	성적만이 전부인가?

교육 방향

이정란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이아름	왜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죽어가야 하나요?
곽인호	왜 학교는 아이들의 심리적 성장과정에 대한 이해는 없나요?
이정석	우리나라 과학영재들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바뀌어야할까요?
홍연곤	왜 밤 늦게까지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고 숙제를 하고 있을까요?
김영훈	보잘것 없는 출신 배경과 폭력적인 성장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과연 그 흔적들을 지워내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iam	왜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육군사관학교와 경찰대에서 따로 조직 엘리트를 양성하나요??
황기웅	왜 대한민국 학교에서 수업 중에 양질의 책들을 친구들과 함께 꾸준히 체계적으로 깊이 읽지 못하는가?
장수원	초등교육 부터 신문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논조, 기사의 의도 파악, 방송사의 이익관계 등 정치와 언론의 불투명한 행태들에 대해 필수적으로
	알려주고, 토론하는 수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JUNAH OH	민주주의 시민을 위한 인성과 윤리 교육개혁의 중요성
김유동	생각하게 하지 않는 교육을 왜 계속하는 건가요?
김경숙	돈 버는 천재와 교육은 육성하면서 행복을 만드는 천재와 교육은 왜 육성하지 않는 것 입니까?
박경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은 불가능한가요?
김명선	선생님도 아이도 행복한 학교를 만들수 없을까요?
정병균	윤리 도덕 교육 강화로 우리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고 격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종철	공교육의 목적이 행복인가요?
윤찬삼	시험이냐? 교육이냐?
류금숙	(학교에서) 모두가 함께 잘하면 안 되나요?
육현호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이윤진	자살률 세계 1위. 우울증 세계 1위의 오명을 지우기 위해 교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 다른 선진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가?
김성회	소통의 단절을 단순한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님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박연주	우리 사회에서 과연 검찰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이 가능할까요?
김세일	우리가 윤리적, 이성적인 생각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전국민 교육 방안은 없을까요?
안용찬	왜? 우리 학교교육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나요?
김혜정	초중고교 수업과목에 시민교육/주제별 토론시간을 필수이수 과정으로 지정합시다!
김제용	교육의 백년대계와 무너져가는 교육자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간제 교사의 개편이 시급합니다.
정은숙	혐오를 사라지게 하는 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박길순	학업에 대한 평가 횟수가 증가하면 학력 수준이 높아질까요?
송세나	교육변경(국어: 독서,일기쓰기로) (정치,사회:국회와재판소 정기참관으로)
신미래	왜 학교에서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남궁호	육군사관학교를 폐교하고, 해군·공군·경찰대까지 포함한 통합사관학교를 신설해야 하지 않는가?
정소영	한국을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없나요?
이지훈	학생인권만큼 교사인권도 소중한 것 아닐까요?
박준태	교권 추락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 세대의 교사들이 자신의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명진	학교 현장체험학습 인솔 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묻는게 맞나요?
김동환	대한민국 작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의 개혁 아니 혁명이 불가피합니다.
임강빈	독서 실컷하도록 과목별 절대평가 및 논술 위주로 입시 치릅시다
박승원	교권이 너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상일	도덕과 윤리교육, 역사교육 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
윤연정	특목고는 설립 취지와 그 목적/목표에 맞게 운영되고 있나요?
박정희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은 불가능한가?
김지수	왜 학교 시험은 100점을 맞아야할? 그냥 Pass or None-pass로 하면 배움이 즐겁지 않을까?
김선우	왜 중학교 1학년부터 학교에서 시험을 치뤄야 하는지요?
강수정	아이들이 실력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험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윤연정	지금까지도 우리 아이들이 푸는 문제 유형, 선다형이 어디에서 온지 아세요?
신홍섭	학력차별 금지를 위한 실수를 허용하는 교육은 가능한 것인가?
양지완	한 명의 문제 아동에 의해 한 반의 학생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윤지나	학교에서 교육의 양보다 질이 높아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는 지금보다 달라질까요?

교육 행정

임상욱	아이들에게 빼앗긴 어린 시절을 되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우리	왜 초,중,고등학교에 cctv가 설지되지 않나요?
박미정	교사는 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는가
이동분	아이를 키우기 위한 마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나은영	교육감 선거는 왜 지방 선거와 같이 하나요?
조종례	한 교사당 수용가능한 적정 학생수는?
박종윤	대학교수에게도 초중고 교사와 같은 필수 이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영민	왜 나라는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자에게 신용불량자위기에 빠지게 하는가? *학자금 대출
성원석	왜 교육감의 투표권은 교육받지 않는 사람한테 있나요?
김지연	초, 중, 고교 교장의 직책 정년을 5년쯤 당기면 어떨까요?
김경진	대학 가지 못한 청년들은 국가장학금이 없나요?
김경성	(교육) 왜 장학사는 100%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나요?
안정화	교육감 선거!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것이 어떨까요?
이한아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왜 학급당 인원수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홍현희	유치원, 초·중·고 교사 종합심리평가 후 채용이 불가능한가요?
김미란	학교에서 아이들은 제대로된 보호를 받고있는가?
김새롬	교육부는 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지 못할까?
김새롬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에 하등 도움 안 되는 행정업무만 점점 늘리고 있고 학교에 생기는 문제들은 막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김새롬	교사 정치권은 그래서 언제 쯤 쟁취될 수 있는 것인가?
남정화	중고등학교 시간강사는 왜 일주일에 14시간까지만 강의해야하나요?
장한수	[귀한 아이들을 귀하게!!!] 초중고생이 줄어드는 만큼 단순 계산으로 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승호	참다운 교육자를 교육할수 있는 방법 이나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임성현	교육부는 모든 고등교육기관 eduroam 을 지원할수 없는가?
강은영	경기도교육청에 취업사기를 당하는 교사들!! 민선교육감들의 정책에 농락당하는 기간제교사들을 위한 법은 왜 없는걸까요?
양창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너무 없어요
김새롬	학교가 크나 작으나 왜 체육관은 하나일까?
설원경	교육부 재산인 학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은 없을까요?
동은미	왜 진정 훌륭한 교사는 승진을 하지 못하는가?
유웅상	공사장 인접 학교의 교육환경안전, 이대로 좋은가?
초등교사 현운석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싶은 직업 1위는 예전 이야기, 지금 직업만족도 어떻냐고요?
신홍섭	교육기관 체질개선을 위한 신 시급 급여제도 실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가능한가?
양지완	학교 녹지법을 제정해 주세요.
이경민	교사는 왜 정당에 가입할 수 없을까요? 정치적 불가촉 천민인가요?

교육 (기타)

조원향	왜 학교에서는 답 있는 것들만 달달 외우는 공부를 시키면서, 학교를 벗어나면 답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걸까요?
도영애	교육!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유진	장애아동이 아기 때부터 특수교사를 만날 수는 없을까요?
김윤정	아이들에게 비판 의식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 개혁이 필요합니다.
박혜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염희경	장애아동 보육, 교육 차별 받지 않는 정책 수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지윤	종신지계 막여수인, 우리나라의 교육과 연구의 목표와 지향은?
최종범	초등생 여름, 겨울 방학 기간을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이승진	국민건강보험은 있는데 국민교육보험은 왜 없을까요?
윤석신	왜 남녀를 구분하여 교육해야 하는건가요?
윤선욱	유치, 초등학교는 한 선생님이 반 아이들과 함께 쭉 올라가면 안돼는 이유가 있나요?
이지은	느린학습자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은 없나요?
이정아	대학생들이 취업 문제로 졸업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떤 전공을 하든 취업에 곤란이 없는 세상이 올 수는 없을까요?
박찬영	법정의무교육 등 이수 이대로 괜찮은가?
주혜경	한 명의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최소한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

조원용	가장 비싼 소비재인 집 즉 의식주 중 주에 대해 국민에게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명섭	교육은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이지우	왜 추운 겨울에도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어야 할까요
김윤규	초중고 동아리(부) 활동을 키울 수 없나요?
orangey1004	학교는 왜 정부의 각종 정책을 홍보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야 하는가?
남궁호	상담 녹음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최진아	의사가 진단서에 일상생활 가능하다는데 학교 출근을 막을 수 있나요?
서윤경	학습지 회사의 부당 영업 행위 강요는 막을 방법이 없나요?
SHANE HORNSBY	학부모의 지나친 학교간섭 이대로 둘 것인가?
김경혜	특수 학교 입학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특수 학교를 최대한 많이 세워 주세요!
윤은주-q7z	장애는 다름이고 조금 불편한 것이라는 인식개선과 충분한 인력지원 장소가 필요합니다.
경민선	돌봄 센터의 운영 시간과 서비스 수준이 학교마다 달라 아이 양육이 어렵습니다.
이몽용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근본으로 삼고 교육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하유미	기후위기와 AI시대의 학교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노경태	지체장애인도 말안들으면 예외없이 혼나야 합니다.

평생 교육

이승현	고등학교 정규과정에 부모교육을 하면 안됩니까?
윤석신	농업을 초,중,고 기본교육으로 지정하는 어떨까요?
이지우	엄마들을 위한 교육 복지 필요합니다
유형우	저출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고령화 교육
이원진	저출산 시대에 왜 우리는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하지 않는가?
차상현	대한민국 교육은 왜 부모 의무교육이 없나요?
김진희	아이를 극우로 키우지 않으려면 부모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현석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공부는 왜 해야 할까요?
이영	문화강국 대한민국에 노인을 위한 교육과 문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임순자	지방에 사는 60대 후반 여성 노동자 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무료 배움 프로그램은 왜 저녁타임은 없을까요
이현희	55세이후부터 인생 의무 재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합시다.

경제 및 산업
국가 경제

김인애	사우나 세신비, 결제 방법 확장이 필요합니다.
조영호	양극화(부)는 해결이 안되나?
주현정	우리나라는 왜 외식비용도 비싸고 집에서 해먹는 비용도 비싼가요?
김신웅	부자 세금 물리기 - 아파트 값 문제 의대 쏠림 현상 지방 균형 발전 비정규직 문제 해결 가능!
이경미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고액 체납자들의 돈을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정윤아	중국인을 비롯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같은 외국인 취업 관련 별도의 세금을 왜 안받을까요?
전우형	2021년 제정되어 2025년 1월 시행된 연금저축, IRP, ISA등 절세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백경재	왜 베트남에서 3천 원에 먹는 쌀국수를 우리나라에선 1만 원에 먹어야 할까요?
문찬우	국민들의 주식 장기 투자를 권장하려면 주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율을 낮추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황희	우리의 자본을 공정하게 나눌 방법은 없을까요?
한정훈	일생 한 번이라도 1금융권으로 부채를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신중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는 없는가?
전인현	왜~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가지 않지요?
이윤표	한국의 조세 정책은 부의 축적과 이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물이다
양정인	부의 불평등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요?
박진우	왜 같은 배기량이라는 이유때문에 1억이 넘는 외제차와 23년째 타고 있는 평가액 100만원도 않되는 중고차가 같은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양해동	불경기에 국민 대다수가 힘들어지는데 왜? 은행은 돈잔치를 할까요?
박상기	화폐 개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박영재	왜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의롭지 않을까요?
최준호	소비를 줄이면서도 경제성장이 가능할까요?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김미선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한 것은 금융회사와 사채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요?
고미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
김종진	트럼프는 달라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입법화해서 달라스테이블코인을 실물 달러 대신 사용하려고 하는데 왜 한국은 무관심한가?
강민구	가계 부채를 디레버리징하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질문 드립니다.
정헌구	디지털 경제주도로 먹거리/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해소로 삶의 질 개선
정의철	사과는 왜 비싼가요?
이승진	법인카드 및 자산 사용 적격화로 소득의 격차를 줄일 수 없나요?
김광진	절세 계좌(개인연금계좌, IRP, ISA) 운영, 해외 ETF 투자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정민	우리나라도 금융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정석	비대면 금융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배당 소득세를 20%쯤 올리고 분리 과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준원	경제 성장률 3%~5% 달성을 위해 서울 같은 메가 시티를 지방에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경미	원자재 가격 하락되면 소비자가격이 내려가기는 힘들겠죠?
정윤아	화폐 단위 우리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오정아	부자들이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고 납부할 수는 없을까요?
이윤수	T. Piketty가 주장한 누진세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은 관심이 있나요?
송태영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 이대로 괜찮을까요?
남진희	국민소득이 3만6천 불이 넘는다는데 내 몫은 어디에?
변일영	북한의 김정은 정치 세습은 비판하지만 삼성의 경영 세습은 왜 비판하지 않는지요?

이동회	지역별로 법인세를 차등 적용합시다.
하준서	국가 성장을 위해 절실한 입법 제안입니다.
이인택	최저시급을 1만5천 원으로 인상할 경우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까요? 물가가 상승할까요?
허성신	금감원은 언제 개혁 되는지요?
이만구	금융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 것에 대한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이인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성민	유가 문제를 국내 모든 산업계가 감내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동회	세대별 차등 기본 소득제를 도입하여 세대 간,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원용봉	임대소득 세금과세도 노령연금 수령도 균등하게 해 줄 수는 없는지요?
박병관	우리 나라는 다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최준영	부란 무엇이가? 왜 누구는 부유하고 가난하며?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가난한가?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김형집	기업들은 제품가격 올리기만 하고 내리지 않을까요?
이종현	개인 연금계좌/절세계좌 세금혜택을 왜 줄이나요?
이시연	사과 가격은 왜 안 떨어지나요?
김경용	물가상승의 이유는 뭔가요?
jheartu7036	왜 한국의 빈부격차는 세계 최고입니까?
박병일	증여세, 상속세 폐지를 왜 하지 않는 것인가요?
shinhyunmin6937	선진국은 기업으로 받는 배당금은 분리과세로 연 15% 세율 일괄적용인데 왜 한국은 종합소득세로 중과세 때리나요?
최가라뫼	미성년자 경제 교육으로 주식이나 채권같은 금융상품을 주는 건 어껄까요?
우용철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금융서비스의 한계를 완화할 수 없나요?
한상원	경제적 격차 완화를 위한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은 불가능한가?
배상원	고환률로 물가가 높아져서 민생이 어렵습니다. 높은 환율이 특정한 집단에게만 유리한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적정한
	환율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해서 정책으로 시행하고 관리해야 하나요?
김용구	계좌를 20일에 1개만 생성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인 방법 아닌가요?
김형근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할 방법은 정녕 없는가?
임유성	이자로만 배불리는 은행.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조명근	자동차 기름값은 왜 빨리 오르고 천천히 내릴까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같은 적용은 안 되나요?
이양근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연금저축액을 늘리고 장려하는 방법은 수령액에 상관없이 저율분리과세해야 합니다.
김지애	왜 나의 신용을 은행에서 결정하나요??
신범진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혜택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필상	경제성장이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김세진	차명 계좌를 못 쓰게 할 순 없나요?
강석규	통장 압류 좀 완화 좀 해주세요
김대희	민주당 상속세 개편안 문의
이동회	도농 간 지역 화폐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주세요.
최가라뫼	고정 금리 비중은 왜 낮을까요?
한현옥	은행에게 사회적 공공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수익의 일정액을 사회와 국민에게 돌아가게 해야합니다.
장정숙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정도는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로 적용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민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배당, 이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박영석	예금 금리는 계속 내려가거나 동결되는데 왜 대출 금리는 내려가지 않나요?
최근	소비가 많은 젊은 층에게 하는 증여세율을 완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김세진	물가 상승이 되는 것에 있어서 유통구조 문제라고 보는데…
dangdangkim-sm1gc	1인 GDP 3만6024달러가 국민들에게 의미가 얼마나 많을까요?
김다혜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의 기본 공제 금액이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권애임	국민형편에 따라 변동하는 세금변동제 도입 가능할까요?
방가영	농업 & 식품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면 물가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태윤	내가 내는 세금의 일부를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박성호	달걀 파동 이후 한 판 가격이 두 배로 올랐습니다. 이게 정상가인가요?
김영범	은행의 이익이 높아질수록 국민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차순길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 비용으로 재산을 증여한다면 세금을 내라고 하기보다 보조금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JOHN JUNG	캐나다 이민자입니다. 한국의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는데 세금을 모국에 내고 싶습니다.
강영은	핸드폰 이용 요금의 정상화는 언제 이뤄질까요?
이형언	수입 금에 관세를 꼭 부과해야 할 까요?
임진현	금융설명서 제작 하는건 어떨까요?
지재우	법인세와 지역균형발전 관련 공상을 올려봅시다
김명재	국세청이 과세업무를 잘못하면, 누가 바로잡을 수 있나요?
박광곤	법인세 납부시 국세청향 불필요한 종이자료 제출 최소화를 위해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합니다.
김종수	한국 콜라가격 일본보다 2,5배 미국보다 6배 비싸게 사서 먹어야 하나?
신홍섭	인재 양성에 무임승차한 기업에게 부과하는 인재채용세 법 통과는 가능한가?
함인호	대한민국에 주식회사 있나요?

산업 경쟁력

이지환	정부의 AI 산업 진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 지금의 방식은 적절한가?
최준원	하루빨리 AI.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합니다~
김민승	통신이나 신용카드 약정을 해지하는게 왜 이렇게 번거로워야 하는 것일까요?
문형규	극자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공승용	음식이나 광고에 본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못고치나요?
박나은	지체장애인 가족이 통신 요금 폭탄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지체장애인 맞춤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모두의 질문	대한민국 산업 전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김민준	노동자의 안전과 보수가 늘어나면 산업과 경제가 상승한다는 공식은 적용을 못 하나요?

이승훈	유능하지도 않은 재벌을 유지해야하나요?
김민선	나는 평생 경제 활동을 하고 열심히 일 했는데 왜 노후가 준비 되지 않았을까?
이선영	서울의 본사를 둔 회사가 지방에 지사가 있어서 낸 매출액과 수익은 꼭 바로 서울로 송금해야되나요?
이중희	기본소득 정말 필요 하지 않을까요?
이원창	부모가 자산가여도 자녀 세대는 경제적 불안…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송봉근	경제적으로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는데 왜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을까요?
양원모	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미래 산업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기 바랍니다.
이애란	이재용이 없는 삼성은 안되는건가요?
이혜정	우리나라에 삼성이 없으면 우리나라 망하나요
오용섭	국가가 선정한 지역별 국가첨단산업단지 성공을 위해 지산학연은 어떻게 해야 경쟁력이 생길까요?
정흥민	기본 소득 사회로의 전환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문병환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부정의 행위를 예방하는 데 있어 실효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신혁	우리나라는 언제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한 일류 국가가 될 수 있는가?
안혜랑	국정 외에 사기업에서는 국내 개발 인력에 대한 투자 태동은 없을까요?
이현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이호	자본에 잠식되고 몰인성화 되어 가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 민주화와 법의 형평성을 과연 이루어 낼 수 없는건가요!
이윤수	미래의 담론을 기본소득으로 이끌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김정묵	대한민국 재벌들은 자신들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것을 원하나요?
이광현	고용을 늘리려 하지 않는 기업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문성	언제까지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불로소득이라고 죄악시 할 것인가?
임정훈	왜 우리는 삶의 잣대를 돈과 경제에 두고 있는가?
유진호	왜 틀린 조직이론으로 국가, 기업을 운영하려고 할까요?
이정환	사모와 공모의 기준인 50인이하이어야 하는가요? 그리고 규모 10억원은 이 규제에 묶여 있나요?
임이로	왜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그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지 않는가?
정성종	증권 시스템 개선이 가능할까요?
최필승	이제는 기업이 잘되어야 노동자가 잘되다를 노동자가 잘되어야 기업도 잘되고 나라도 잘된다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염현호	한반도의 미래먹거리는 무엇일까요? 아주 쉽고도 어려운 답이 있습니다.
송승하	경제 발전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영선	왜 우리나라엔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많을까요?
이건석	우리는 왜 제2의 삼성, 현대를 가질 수 없을까요?
빈연주	왜 법인은 폐업하면, 채무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나요?
김민석	미래 산업과 현재 산업의 노동자 이권이 충돌할 때 정부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장창웅	성장동력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미래는?
박경진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
최준용	회사 내 승진이 왜 능력 이외의 것들에 좌우될까요?
이주협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권병수	노동자 급여 체불, 퇴직급여 체불 한국은 기업하다 망해도 3대가 먹고산다.
송재경	경영권 세습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지는 않을까요?
김영환-g1e6u	전문가 vs 비전문가. 균형점은 어디인가?
nassol	우리는 협업을 통해 경제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
lala-vu1uu	중소기업에 다녀서 급여가 적은데 지원은 청년 아니면 고령이더라구요..
oldsong___	부자연스러운 제조업/시장 의 생태, 원인은 무었입니까?
익명-f	왜 반도체 산업법에 주 52시간제외가 필요한가요?
강다운	기업들의 채용 방식 바꿔야 하지 안나요?
유창선	삶의 최우선 가치가 경제적 능력이나 부가 아니죠?
이완희	왜?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 남발은 그냥 놔두놔요?!
강대삼	경제 공동체로 진정한 대동세상(大同世上)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박용식	국가 전략 산업 선정 및 장기적 육성이 필요하다.
최고봉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배혜정	임금체불,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경제 범죄'입니다.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윤태영	나락으로 빠진 국가경제 및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방법은?
송인아	독일식의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대변혁을 이루길 바랍니다.
이유	경쟁 없는 자본주의, 문제없나요?
박광곤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후 XBRL작업 왜하는가?
윤성원	왜 우리나라에는 서비스R&D가 없을까요?
윤성원	우리나라는 디자인으로 번영할 수 있을까요?
이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기업이 결합된 공동체 기업으로 자본을 순환시키는 건 어떨까요?
김기두	대한민국에선 왜 적대적 M&A(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을까
유정훈	주4일제 도입 검토에 앞서 사업소득자의 소득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권택	화폐와 이윤에 기반한 현 경제는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생존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까요?
차성훈	국부 펀드 지분공유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면 농협, 수협, 입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은 싸그리 공산주의인가?
방가영	핸드폰 요금제(통신비) 낮출 수 없나요?
허영란	해외카드, 일반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 못할까요?
김명재	남자 주부는 왜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나요? ^^

금융 자산

이송엽	지상 최대의 과업은 강남 빌딩 소유인가?
최가라뫼	주식 중독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지민우	아파트 가격의 안정적인 관리는 가능한가요?

이유미	부동산의 공시지가도 오르고 매매가격이 올라가는 왜 세율은 10년전과 비슷하고 구간만 높아지고 세율이 높아지는 건가요? 물가 상승율을 반영한
	여타 다른 세금 구간 조정과 세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도연	주가조작하는 사람들은 왜 처벌받지않나요?
임은선	너무 많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과 상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지윤	서민은 대출이 많으면 왜?고금리 대출 밖에는 쓸수없을까요?
김지혁	우리나라는 왜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가요?
이석환	대한민국 주식 왜 저평가인가?
최준호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진짜 옳은 선택일까요?
김미선	불법 대부와 불법 사채를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은 왜 규제하지 않나요?
최지연	대한민국 주식은 왜 늘 제자리일까요? 코리아 저평가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진완승	한국주식 시장은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준석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투명하지 않다고 느껴질까요?
이주경	왜 대출금리는 예금금리보다 항상 높아야 하나요?
김범석	부동산 광풍 흐름 속에서 대출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부담을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할까요?
김해준	국내 주식시장은 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임동균	저는 네이버 밴드 주식리딩방 피해자입니다
남대현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자입니다. 기업은 기관 및 애널리스트만을 대상으로 IR행사를 진행하나요?
김명환	왜 코스피 코스닥 장기투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가?
양소정	왜 서민들은 대출받기가 힘들까요?
윤성혜	청년농 대출 지원금에 대해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shinhyunmin6937	왜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가 없나요?
황철수	DSR 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
최형진	소액주주 좀 살려주세요.
이상현	민주당 당예산 규모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구매 후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혜경	크립토 패권의 시대에 대비가 되고 있나요?
이경원	소액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수 있는 은행이 필요해요.
김선희	강남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 집주인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인가요?
박용기	주식시장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박성규	대출금을 잘 갚아도 왜 신용점수는 오르지 않죠?
박성규	공공서비스는 소득만 따지고 부채는 왜 안 따지나요? _ 빚쟁이는 국민 아닌가요?
박성규	2금융권이나 대부업 이용자는 1금융권에서 왜 안 받아 주나요?
정숙자	왜 제로페이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나요?
정창규	상호주의 도입, 중국자본 부동산투기, 외국인 대출, 부동산정책 실패, 주택만큼은 국가가 일부 통제 방안
김세진	정부는 왜 대부업체를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나요?
박성남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내국인과의 역차별과 부동산시장 왜곡에 가중요인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박민경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폐지 또는 보완이 필요한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장준영	국가주도 사업에 일반 시민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투자상품 개발해 주시면 안되나요?
임진현	일반 직장인들과 개인 사업자의 신용 평가 기준은 서로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한재규	코인 (가상화폐) 과세 및 법적인정이 꼭 필요합니다!
정재일	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언제 해결되나요
김세진	법인 대출로 부동산을 구매해 재산을 증액하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닌가요?
koreanmama6122	왜 은행에서 '자격 요건'을 내밀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장경상	금융교란 불법공매도 방지 법안 및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박선영	해외 주식 양도 차익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박정규	은행 이자 상한선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성운	부동산 가격 코브라 효과를 피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박문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포함된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워져야 하지 않나요?
방가영	비대면 대출 사기 근절 방법이 있을까요?
선우강	고금리대출 성실상환자에 대한 재기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조성택	자영업자(유튜버)를 위한 필수 기초 교육 제도 유무?
김근섭	학교 급식을 주변 상권에서 해결하여 구도심을 살리자.
박영훈	개인자영업자 코로나대출(우리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일시불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영재	40~50대 자영업자들이 젤 힘든데 왜 아무런 혜택도 관심도 없어요?
길영철	빚있는 자영업자는 이자감면을 해주는데 빚없는 자영업자는 그에 합당한 지원을 안해주는가?
이병철	소상공인 살아갈수 있을까요?
정헌구	세대 화합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박세민	왜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강제적으로 영업 정지 및 각종 제한을 하여 영업 손실을 주었으며 그 손실에 대한 보상 명분하에 저금리라는 은행
	빚으로 보상하였나요?
성애경	코로나 시기 동안 성장한 대규모 플랫폼으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고통받습니다.
김영열	대한민국에서 창업 실패하면 왜 재기가 어려울까?
김선정	4050대 자영업자의 소리 정작 우리가 힘들땐 나라는 무얼해줬나요?
박종찬	550만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장승일	음식업자 폐업이 될 수밖에 없는이유가 음식업중앙회에 있지 않는가?
김학삼	대한민국 제조중소기업 운영자 입니다.
정유경	왜 자영업자들 지원 사업은 대출 뿐인가?
박민정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미지급분을 지원하겠다던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 현재도 유효한지요.
조성근	왜 대한민국의 요식업은 프랜차이즈로 귀결돼야 하나요?
김승현	배달전문 장사를 계속해야 할까요?

송효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왜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을까요?
김사원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영순	소상공인 좀 살려주세요.
김영선	보수세력이 집권하면 자영업자들은 왜 힘들어지나요?
김기범	젊은이들이 성공(1차적으로는 돈 많이 벌수있는)해보려고 산업이나 신 사업에 투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주세요.
이지영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실제 일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사업가들이 제대로 정당한 댓가를 못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배달 플랫폼 수수료 횡포를 컨트롤할 수 없는가요? 자영업자 사망 중입니다.
김미화	주4일제 근무를 하면 개인 사업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며 개인 사업자를 위한 정책은 있나요?
노기필	배달 앱에 종속되어 가게를 운영하는 현실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천동원	왜 자영업자는 계속 피해만봐야하나
shinhyunmin6937	중소기업 도산 하는 원인중 하나인 어음은 왜 안 없어지나요?
shinhyunmin6937	공무원/대기업직원은 대출 우대되는데 중소기업직원은 왜 대출조차 안될까요?
박규현	소상공인들 울리는 노란우산공제의 병폐를 막는 개선 방향은?
이명진	왜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부채에 허덕이며, 영업 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김백민	젠트리피케이션 소상공인의 설움....국가 주도로 왜? 해결 못하나요?
제갈용준	중소기업의 지원과 혜택은 어떤 회사가 받는 건가요?
윤남현	상권 부흥에 대한 보상은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
이강주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 도입과 지역화폐 연계 방안
노건호	대기업과 중소기업, 현대판 신분제인가? 노동 격차 해소 방법은?
우경호	미국처럼 자영업자를 지원해주세요!
임영규	기성품의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에서 고객 맞춤형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이진재	베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소상공인(100인미만 사업장, 특히 식당, 카페등)의 의무도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신현우	외식업의 높은 폐업률, 본질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종면	중견 중소기업 대상의 정부의 무료 컨설팅 활동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종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조 거래혁신은 한국에서는 어려울까요?
최희수	배민과 쿠팡의 횡포로 소상공인이 죽어갑니다
김근우	자영업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경진	코로나로 내란으로 …절망에 지친 소상공인들의 삶은 언제 쯤 나아질까요?
이원규	소상공인은 육아휴직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김사원	프랜차이즈와 소상공인이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이 될까요?
장영신	자영업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을 벌지 못하나요?
김종욱	코로나의 책임을 맨몸으로 받아내고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이연우	여성기업 수의계약 한도금액 상향 조정과 최저가 입찰의 문제등 간식업체의 고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정명진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게 대출지원들을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수 없을까요?

산업 경제

김성빈	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다양성을 억제하는가?
김영열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언제까지 국민이 참아야 할까?
정금희	한국의 건설 품질을 어떻게 높이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백승호	고환율·정치적 이슈로 침체된 면세업계 지원 대책은?
엄기문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는 없는 건가요?
전우식	공기업과 사회적기업들 나랏돈 좀먹는 모피아들에 대하여
박장보	대기업의 착취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노학성	중간유통업자로 인해 비싸지는 물가는 잡을수 없나요?
김재성	당일배송새벽배송총알배송로켓배송 과연 소비자들은 정말 빠른 배송을 원할까요?아니면 하루 늦게 받아도 괜찮아요라는 가치에 더 공감할까요?
김문철	대기업과 하청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일수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종필	배민, 쿠팡등 대기업의 독과점은 해결할 수 없나요?
박재덕	쿠팡 이츠와 배달의 민족의 횡포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정헌구	Korean Diaspora Cluster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모델을 해외에 전수하면 어떨까?
김상화	대한민국에서는 스타트업에 한 번 실패하면, 왜 재기가 쉽지 않나요?
김영호	왜 공공기관, 사기업채용에 대한 고졸이상 채용으로 안 바꾸나요?
송무복	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은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하지 못 하는 걸까요?
장경상	대기업의 통행료 제한은 민주당이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이재원	건설장비 임대료는 왜 지급받기 힘들까?
홍창효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은 블라인드가 맞을까?
강일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윤성재	왜 자동차는 환불이 안 되는 걸까요?
김동인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동섭	대한민국의 작은 의류생산업체의 위기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정택	우리는 언제까지 박스나 갯수로 과일을 사야 하나요?
최영진	저희집에 오는 택배기사 또는 택배 회사를 선택하고 싶어요
민동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업주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요?
김영호	왜 이재명 선출직 공무원은 대통령의 독재시도금지법을 당장 안 남드나요? 민생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법 아닌가요?
김재웅	한국의 스타트업의 투자계약서는 왜 글로벌 표준과 다른가요?
이도엽	왜 대기업 공기업 은행은 국민이 힘들때 도와주지 않는가?
최윤선	자동차 관련 법들은 왜 소비자 편이 아닌 제조사 편인가?
남궁호	반도체 산업이 저조해질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산업 기반이 부족하다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어느 정도일까?
허철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은 최적화되지 못할까요?
고정진	대한민국의 물류 유통은 개혁이 필요하다.
채병철	택배 운임은 왜 크기에만 비례하나요? 가격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구강영	현재 전기는 공공재입니다. 2050년 전기는 공공재로 남을지, 발전공기업과 발전사기업 간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지 정해야 할 때입니다.
박경태	인쇄산업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뭔가요?
문지은	티몬, 위메프 사태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소상공인)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배태랑	한국은 농축수산물 등 식자재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건가요? 개선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이영호	대기업 건설사 부도를 왜 국가에서 살려 주어야 하나요?
정철	건설 감리는 전문 직종입니다. 일부 직종의 진입이 유리한 환경, 실질적이지 못한 교육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공진세	건설업 최저가입찰. 하청구조 괜찮은가?
최봉식	왜 건설 엔지니어 개개인의 수준은 점점 더 하향하고 있는가?
윤승범	배민, 쿠팡등 소상공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는 공기업화 할 수 없는지?
한승호	AI 시대를 위한 스타트업 성장 지원은 무엇일까요?
김세진	국내 기업은 왜 생산품을 자국민들에게 더 비싸게 파나요?
최종면	공단, 공사와 같은 공기업 및 중앙부처 등의 산하기관 내 공기관은 왜 전공을 무시한 인력운영으로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까요?
고정진	국내와 국외의 차별되는 부분에 대한 용역조사 및 대안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한종	서민 부담으로 정부 배당 챙기기, 공기업의 역할은 어디에?
윤연정	시장과 마트의 모든 부분에는 차이가 없나요?
차성훈	홈플러스 사태를 비롯한 롯데, GS, 신세계, 농협 등 물류 및 유통 업계의 위기는 무엇으로 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박현욱	국내 농산물 유통,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질문이 필요하다
jaythefxxkinaysh	중국 인도의 철강업 발전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1차 산업

최윤배	농업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김지수	식량자급도가 무엇이며 이것은 왜 중요한걸까요?
홍종환	농업 직불금제도 과연 필요한가?
김태욱	농민도 자신이 키운 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줄 수는 없나요?
기희진	농어민들은 비과세 직종이라 관련 제품공급이나 공사업체는 탈세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있어요.
박주석	농민이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농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지혜	농업 등이 1차 산업에서 생산자의 몫이 지금보다 많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곽윤형	청년농은 왜 맨땅에 헤딩을 하듯이 농업에 입문해야하나요
김영욱	농촌형 농축협에 상임이사 제도가 꼭 도입되어야만 하나요?
김영호	왜 농민들을 위한 단위조합이 아닌 농협중앙회가 따로 있나요?
김영호	왜 농민을 전혀 위하지 않는 농협중앙회를 해체하지 않나요?
문준필	대한민국은 수도권을 블랙홀로 만들어 모든 지방을 소멸하게 만드는가?
박문용	농협(농업협동조합)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현구	모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도대체 쌀값은 왜 수십 년째 그대로인가요?
김명웅	농업을 포기한 선진국은 없다?
이동현	기본사회 대전환, 지역부터 실천한다 책 어디서 읽어 볼수 있나요?
김승환	농업직불제 지급조건 / 왜!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인가요?
김동광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의 전기 요금을 낮춰 기업을 유치하자.
김주효	농업에서 주 4일 근무는 가능할까?
강헌희	미래의 농업,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송경진	농민 기본소득제를 만든다면?
이기선	무조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젊은이들에게 농업을 장려할 방법은 없을까요?
김정곤	농지는 전북도에 있고 주거지는 경남도에 있어 양쪽 지역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병철	호남의 정치발전은 왜? 경제발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남궁호	이번 기회를 통해 대통령실을 용산에서 세종으로 이전하여 행정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계기로 산업 구조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권영기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용결	낙후된 지역과 지방에, 산촌과 농촌에 소득원을 늘릴 방법이 있는가?
김형일	서울 집중을 막기 위한 세금 정책을 무엇입니까?
최철웅	농산물만 왜! 농민에게 가격 결정권이 없나요?
김효기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농협의 공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요?
김희숙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한가요?
이병우	농지 스왑을 통해 콤바인의 이동, 정비 시간을 줄이면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런 정책은 실현이 불가능한가?
신재호	농자재 경량화를 추진해야 한다.
서한섭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은 있는가?
박정임	농업 유통구조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정임	포도자조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봉민성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범위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이은주	농업현장의 부족한 일손문제는 언제쯤 해결될수 있을까요?
김리아	농촌 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김현권	쌀은 언제까지 정부가 수매해야 하나? 이 제도가 농민에게 도움이 되나?
이승재	임업 현안에 대해 왜 임업만 침묵하나?
이상귀	임업은 언제까지 차별받아야 하는 겁니까?
정부환	왜 대한민국에서는 유기농업 하면 안되는 농사, 망하는 농사라고 이야기를 듣나요?
이봉진	농민 지원 및 보조 사업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도완영	기후재앙에 대비하는 여러 농업 방향 중 저탄소 농업 즉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과 정책 지금 이대로면 농업보다 친환경농업이 먼저 끝날겁니다. 친환경농업 이대로 끝나도 괜찮을까요?
차성훈	농협의 정체는 뭘까요?
도완영	농어민들의 문제들 중 핵심 중 하나는 결국 부채입니다.해결책으로 최소한 김대중 대통령의 해법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궁은경	농지총량제를 제정하자
신영진	아직도 우리에게 "경제자유지역"이 필요한가?

재정 정책

백동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액일 경우 왜 덮어 버린걸까요 ?
송용근	세금으로 자란 사업이 성공했을 때 왜 나는 기뻐할 수 없는가?
최은주	강릉에서도 낚시배 야간조업 가능하게 해주세요
윤주동	왜 법원 경매만 전자입찰 안 될까요?
CHOI HOUN JIN	심하게 과열되는 산업 분야(예:웨딩)를 견제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강현정	대왕고래 프로젝트 하이리턴이라면 국민 세금 쓰지 말고 직접 투자하고 리턴 받으면 되지 않나요?
한창욱	우리나라 기업, 정부는 이공계생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R&D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홍석환	40년 경영에 원금손실 93% 이게 경영입니까?
조성태	기재부의 권력이 너무 큰 거 아닐까?
정윤아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이유는?
서동원	조달청 사무용 가구 시장의 비효율적 구조와 커미션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정석	정부과제 난 언제쯤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영창	해운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은?
이호창	국책 또는 공공의 과학 또는 기술 '연구소'를 추가 하거나 확대하고 민간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성훈	피부과가 많아지면 국가 경쟁력이 좋아질까요?
조성오	지자체 산업단지개발이 개인의 재산권 및 시장경제체계를 위협하고 있다면....
김유숙	기획재정부는 왜 국민의 대의를 실행하는 행정부의 일원으로 보이지 않고 단독적인 이익집단처럼 행동할까요?
강정미	기재부 기능과 역할 위상 조정이 필요합니다.
김영식	왜 전세계 에어소프트건 시장을 일본과 대만이 독점하나요?
도완영	IMF 극복할 때도 분리되 있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이대로 합쳐둬야 하나요?
최종면	글로벌 기업으로 활약 중인 회사를 아직도 고용보험 하의 환급제도 등으로 지원해야 하나요?
장광모	어업인은 묶어서 놓고 비어업인은 풀어 놓은 비 합리적 제도가 관광상품인가요?
오순이	국회 국민 소환제, 국민 펀드, 국부 펀드의 적극 추진을 요망한다.
차성훈	쿠팡은 글로벌 기업 즉, 국내 기업이 아닌 거죠?
한성룡	내 세금의 일부를 내가 원하는 곳에 쓰일 수 있게 선택하면 안되나요?
이정석	왜 우리나라를 지켜온 농업과 1,2,3차 산업제조기반 지원은 어쩌고 유행에 따른 인공지능만 지원해야 할까요?
향기바다	재정건전성 타령하는 기재부에게 끌려 다닐 이유가 있나요?

금융 범죄

김옥자	경제 사기범들의 작은 형량이 사기범들을 키운다
김재억	경제사범 형량이 왜 타 위법에 비해 가볍나요?
김일환	경제 사기꾼들의 처벌은 왜 약한가요?
송현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왜 피해자가 아닌 정부로 귀속시키나요?
이병국	모든 범죄의 목적은 경제적이익이 99%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경제적 처벌은 약한가요?
주중돈	금융 다단계나 투자형 사기꾼들 대처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LEEHANGHO	경제사범에 대한 고무줄식 형량, 우리 사회는 대중에게 어떠한 가이드를 주고 있나?
박순홍	대체 왜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은 항상 모자랄까?
이지한	싱가포르 정부에게 1조2800억 티메프 사기 사태 주범들 처벌 협조를 얻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용구	자본주의에 반하는 경제사범의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를 강화합시다.
김백민	사기꾼 경제 사범 노역형으로 돈 갚고 나오게 하면 안되나요??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하게 합시다!!!
정현지	전세사기 등 금융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박지원	은행들 해킹당하는 걸까요? 해킹해서 모피아들이 가져가는 걸까요?
권태우	금융투자를 가장하여 도박을 일삼는 시장교란한자들이 망하면 파산면책해주는것이 잘못된것 아닐까요?
방가영	보험, 대출, 광고, 보이스 피싱 등의 스팸 전화와 문자를 근절 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

전재형	젊은 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 등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김나현	중년이나 노인들의 경험과 기술 지식은 왜 버려져야할까요?
이창기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울까?
신정원	퇴직 노인의 값진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영재	청년같은 60세 정년퇴직자 활용방안이 시급한것 같은데요!
윤경숙	왜 나이 든 여자들이 일 할 곳은 없는 걸까요?
이아르미	안녕하세요. 3050대의 중년층, 즉 허리나이대에 대한 정책과 노인복지(노인 일자리등) 에 대한 생각들이 궁금합니다.
손진호	노인층 젊은층의 실업 및 창업 등의 지원은 많은데 중장년층은 왜 이리 없는지..?
최문성	청년들이나 대한민국의 젊은사람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으려면 어떤 문제들이 협의되고 해결되야 하는가?
이호창	청년세대가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가 활성화된 이스라엘과 같은 연구개발중심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학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본일자리 정책 제안, 기본소득이 있으면 기본일자리도 있어야 합니다.
최준원	노인들을위해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취업교육과 노인일자리를 확대.강화해야합니다.
심은영	청년 취업문제를 왜 국내에서만 해결하려 하나요?
임영규	경제활동 연령은 언제까지 일까요?

지역 경제

이범렬	왜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없을까요?
오용섭	부산은 왜 매년 2만명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나요?
이승하	왜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을까요? 왜 지방 출신 청년들은 비싼 월세를 내면서 서울에 살아야할까요? 왜 재택 근무는 정착되지 않을까요?
김재원	경기 북부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박진하	지방소도시 일자리 문제, 소규모사업장의 횡포와 이런 썩은일자리밖에 없는 현실

도시 및 주거
부동산

원완희	진보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제안합니다.
김대경	대한민국에서 내 집을 안 사고도 집 걱정 없이 자녀 키우며 자연사할 때까지 오손도손 집 걱정 없이 살 수는 없나요?
김도연	질 좋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임대료는 왜 자꾸 오르는 건가요?
김영열	집을 안 사고도 편하게 살 수 있다면, 세상은 더 행복할까?
김태희	작고 노후된 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해서 공급할수는 없을까요?
김용안	부동산 투자에 미친 나라 이거 정말 해결 방법이 없나요?
조홍준	부동산 재개발 비리는 왜 되풀이 되는 걸까요?
김태형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보다 집값이 오른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백선기	공동 명의 부동산의 불가피한 상속 문제가 신용 회복의 걸림돌이 되어야 할까요?
주우정	왜 정부는 사람이 살만한 아파트 또는 주택공급을 안하죠?
하지웅	국가는 왜 국민의 주택 선택권과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나요??
김영호	왜 국토교통부가 직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용 공공임대아파트를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LH는 희망이 없는 엉망진창이 된 지 오래인데 왜
	해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순희	장기전세 만기세대에 대한 대책 부탁드립니다.
함영훈	나는 인구 1만 명도 안 되는 작은 지방의 읍에 거주하는데 왜 높은 집값을 걱정하며 살아야 할까?
이가경	부동산 보유세를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제한해주세요
공진세	집 3채이상 보유하면 보유세 폭탄?!
김광수	대한민국에서는 왜 자가주택을 소유하기가 그리 힘들까요?
노주화	내집마련은 포기해야 할까요?
전태경	전세자금대출이 꼭 필요한 제도인가요? 없애지 못하는 건가요?
양성중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다는 공공주택특별법이 과연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법인가?
차성준	민주주의의 주거문제와 양도세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김희철	40대 후반 가장입니다. 새집 구매나 전세등 주거 혜택이 왜 우리 세대는 없는가요??
김택수	임대료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황승준	빈집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표종한	금융·부동산 사기범 처벌,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김민주	전세사기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주택 임대사업자는 왜 폐지되지 않을까요?
권재범	이번엔 진짜로 부동산 투기꾼 뿌리 뽑으실꺼죠?
정용희	공인중개사가 중개건물 임차인들의 보증금총액을 알 수 있게 해 주세요.(전세사기 방지)
정용희	묵시적갱신기간중 퇴실은 중도퇴실이 아닙니다.
장서윤	반백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집 하나 없을까요?
박종완	언제까지 의식주 중에 주에 휘둘려 살아야할까요
오서욱	왜 전세사기 및 각종 부동산 사기는 계속되는 걸까?
김영호	왜 친족 상속범죄에 의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 구제법이 아직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나요?
김영호	왜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수급자들은 전세임대 매물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나요?
손민관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안전한 집에 살 수 있을까요?
문형규	집은 사는곳 일까요? 투자의 대상 일까요?
윤진득	개발지구에 대한 사전 정보 이용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을 방법은 있는지요?
최익용	다자녀 가장의 주거정책은 현실적인가?
한기형	살고 싶은 임대아파트를 왜 못 만드나?
박지현	아파트 각 1채 소유 제한하면 안 되나요?
최기호	내집마련, 주택문제, 국민의 주거권, 개인이 너무 많은 주택을 소유하는 문제, 땅은국가소유+건물개인소유 주택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법?
김사원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는 세금을 더 걷게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우경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 고성장 시대에는 집장만의 사다리였으나 지금은 갭투자에 대한 무비용 자금조달 도구로 부동산 거품및 투기의 원흉 아닌 가요?
전부성	부동산(아파트) 투기를 막을수는 없는가?
하종희	건설사가 분양 안되면 나라에서 보조해 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진귀수	부동산 신탁의 헛점을 막아주세요
황대용	건물 공실에 세금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윤선옥	집값! 집이란 게 왜 재테크 수단이어야 하나요?
한경아	공공주택 청약 조건은 합당한가요?
신왕수	부동산 사기를 100% 막아내지 못하나요?
김영열	전세사기, 왜 국가가 책임지지 않을까?
송성용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을까?
유승렬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기준이 되는 토지 보유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정가을	언제쯤 내 집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염성식	전세사기범 들의 형량을 중범죄로 다스리게 법으로 재정해주세요.
배혜정	40~50대를 위한 주택정책은 왜 없나요?
황건구	맞벌이 아니면 집도, 육아도 불가능? 주거 문제로 출산 골든타임까지 놓치고 있는 현실
김종곤	우리나라 주거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황성기	살기 좋은 집에서 싸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백정혜	왜 21세기에 아직도 전세 사기가 판을 치나요
염현호	일반 국민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주거문제 입니다. 전세금과 공시지가 연동을 제안합니다.
염진태	현재의 집값은 구입 가능한 가격일까요?
김민재	우리의 '집'은 언제까지 '삶'이 아니라 '사는 것'이 되어야 할까요?
김자연	LH 임대주택 갱신 관련 조정이 필요합니다.
김은선	5060대 집을 구할 수 없어요

손준희	주택의 면적 규제 기준은 적절한가요?
김다연	40대 입니다/청년및신혼부부 위주의 내집마련 정책만 있습니다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이 없을까요
임완섭	한 사람이 100채의 집을 소유해도 괜찮은가?
신혜주	대한민국의 집값 문제가 심각한데 전세를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현희	공공임대 아파트 늘려주세요.
김현숙	우리나라에는 중국인이 왜이렇게 많이 부동산을 갖고있는건지 참궁금합니다
김태호	공동주택에서 의무위반자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강제조항 필요성.
조해규	田(전) 畓(답) 부동산 등기부에 문중명의 등기 가능토록 농지법 6조 개정
김세희	왜 우리가 버는 돈의 대부분은 집에 묶이는 건가요?
이명길	사유 재산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요?
성현	청년들도 근로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세상,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영재	건축물 하자로 인해 정말 장시간 힘들어 질문 올립니다. 장시간 빈집은 실사후 주택수 제외를 해주면 안되나요?
김도연	우리나라는 내 집 가진 사람이 왜 죄인이 되어야 하나요?
강유진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잃어야 하나요?
유지안	우리가 사는 집이란 무엇인가?
박용규	수도권 전철역 도보10분내 위치의 신축 아파트를 평당 1000만원 이내로 구입하고싶은 저는 허황된 욕망을 가진 사람일까요?
최병욱	토지 알박기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지 못하는지요?
김형기	누구나 집 걱정 하지 않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이동수	극과극을 달리는 부동산 문제 어찌할수 없는건가요?
이동희	수도권의 공공택지 개발 지역에는 대규모로 공공임대주택만을 분양해서 주택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한재훈	부동산 관련 세금체계를 바꿀 수 없을까요?
송진웅	농촌에 청년 임대주택을 꼭 아파트로 지어야 할까요?
황정은	언제쯤 서민들도 내집을 가질수 있을까요?
진슬기	무주택자의 서러움..언제까지일까요
이승진	젊은애들에게 신혼집을 마련해 주는 일이 불가능 할까요?
전상도	세입자가 계약기간 2년 되어도 2년 연장할 수 있다며 안 나가겠다고 하네요.
송세나	일인가구의 영구적 임대주택 건설로 주거불안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박성남	부동산 가격 폭등없이 살수 있는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국가는 어떠한 역할과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동희	전세대출을 철저히 규제, 제한 또는 폐지하여 대한민국 주택시장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김희진	임대아파트 주류 주택으로 해주세요.
김희진	왜 우리나라 아파트는 40년 되면 철거하고 재 건축을 하는지요?
손경욱	우리는 왜 거주의 자유가 없을까요?
MSC-xj1ih	전세사기안당하게 법을 구체화 해주세요
LJH_Jubilee	부동산 문제와 그 대안으로서의 토지공개념 궁금합니다
okok21c	부동산 전세계약관련 질문 이면서, 판결을 받았으나, 너무나 어이없음에 정책에 방영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호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할까요?
강경수	전세사기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가요?
이유미	부동산의 공시지가도 오르고 매매가격이 올라가는 왜 세율은 10년전과 비슷하고 구간만 높아지고 세율이 높아지는 건가요? 물가 상승율을 반영한
	여타 다른 세금 구간 조정과 세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태성	버팀목대출에관한 부동산 정책개선을 요구합니다.
임도영	민주당의 향후 주택에 대한 세금 정책은 무엇입니까? 종합부동산세의 똘똘한 한채 양성 제도인 1주택자 12억 공제, 다주택자 9억원 공제는
	금액으로 일원화하는 제도로 다시 검토해 주세요.
박성남	부동산 갭투기, 전세자금대출의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는가?
강호	노령주택제도는 없는건가요?
하태균	우리나라는 왜 집을 소유하고 투자(투기?)하는 사람들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하려고 할까요?
박성남	부동산시장 질서교란행위를 단속할 부동산 감독기구는 언제 만들어질까?
이중윤	전세 계약 문제가 있는 경우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옳은가? 전세 계약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이소영	왜 임대주택 아파트 공실률이 40%인가요? 소득 제한 없이 국민임대 살 수 없나요?
신용현	주택 상속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이용호	50대 중반, 집이 없어요..
이동희	외국인이 서울 및 수도권에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시켜 주세요.
이지한	부동산 투기세력의 통계 조작: 하락 거래는 현재 통계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우리나라는 왜 전세를 없애지 못하는 걸까요?
이강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 집합 건물 관리 개선을 제안합니다.
양정모	부동산 경기가 안좋은 현 상황에서추가주택매수금지 약정서와 같은 제재가 필요한 지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장선영	빈집은 많은데 거래하기까지의 장벽이 있어요.
김광희	외국인 부동산 투자 까다롭게 우리가 사는 집값만 오름
이현구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윤연정	빈 상가와 빈 아파트는 왜 채워지지 않나요?
박정현	재산세 공정 과세와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허준석	기본 주택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선규	시골 주택 소유 포함 1가구 2주택 재산세 산정은 수도권에만 유리한 방식인 듯합니다.
차유미	상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 좀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청정-l7s	신혼희망주택, 글자 그대로 신혼희망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선중	도농복합지역 건축허가 정부에서 사전 검토 시스템 갖춰주세요.
배혜정	노인 임대주택의 복잡한 임대계약 갱신 절차,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박종도	미분양, 재건축 재개발, 수도권 집중, 전세 사기 복잡하게 연결된 부동산(주택) 문제 한국 정부는 해결할 생각, 능력은 있을까요?
이경례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 혹시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장기 임대는 어려울까요?
이경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요청합니다.
민유선	1가구 1주택자들의 사각지대나 고충을 덜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태성	주택 구입의 기회는 공정한가?
최태봉	집값 안정화 = 전세자금대출.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김정현	1인화되고 고령화되는 시대에서 단순히 주거안정화를 위함이 아니라 노령생활을 좀더 가치있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는 없을까요?
원종선	제아들은 서울 관악 신림 에 원룸 살고있는데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특별법으로 구제가 안될까요?
이명재	집없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 주도의 해비타트 운동은 불가능 할까요?
심상우	주택 청약/분양/임대 관련해서 소득기준은 왜 봐야할까요?
박진형	주택을 지을때 선분양제가 아닌 후분양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거와 관련되어서 민간시장에 경쟁입찰이 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영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 부동산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남진우	현재 은행권은 개인이 직접 주택을 건축하려 할 때 대출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지설	40대 미혼을 위한 주택 정책은 없을까요?
송의진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면 어떤 일이 발어질까요?
이용현	우리나라를 왜 싱가포르처럼 토지 국유화를 하지 못할까
탁훈식	도시의 비싼 땅위의 도심공원들은 왜 활용을 법으로 막는가?
윤재복	전세 대출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김유경	집은 왜 꼭 사야하나요? 주어지면 안되나요?
박형래	왜 개인은 정부의 낮은 이자를 직접 빌릴수 없는가?
하나	20대 민생의제 중 주택 임대차 최장 10년 개정안에 임대인의 권리 보장방안도 일부 있나요?
청년 전성훈	자취방은 전세 사기 당하고, 청년 임대주택은 보증금 비싸서 못들어가는 제가 대한민국 평균 30대 맞나요?
강민주	임대차 10년 연장법안설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이동석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김승현	돈없는 사람들도 주거를 보장받으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 정책은 무엇인가?
심형준	인구는 줄고 있는데 아파트 계속 건설 하여도 될까요?
향기바다	도심 초중고 부지에 아파트 지으면 안되나요?
페어리스타-f1q	서로 못믿는세상. 전세사기 법으로 라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odysseiailias5796	삶에 가장 기본적인 주거를 사기 때문에 불안해야 한다니?
namu-hana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권장하는데, 개인이 돈벌 욕심을 포기할까요?
소나무-c2l	나 진짜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17억하는게 정상이에요?
박일석	낡은 주택이라는 생각은 옳지않다.
지완진	한국 공동주택 수명(평균 30년 이상)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함인호	남아도는 주택 어떻게 할까?
이다영	출생율을 계속 떨어지는데 왜 집을 계속 짓나요? 수십 년 후에 이 집에서 살 인구가 있을까요?

교통 인프라

황유민	비오는 날 사라지는 차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민주당 정권하에서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주	왜 자전거 와 킥보드는 번호판이 없을까요?
박용진	시내도로 아스팔트 포장은 왜 보수를 하지 않나요?
박용진	도시철도에 보조금 주세요
김선화	어린이보호구역은 왜 어린이가 없는 주말과 휴일에도 지속되나요?
김성철	우리나라에 공항이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김태현	왜 비오는날 차선이 보이지않나요?
백철	왜 시골마을에는 차도만 있고 왜 인도가 없을까?
서은미	고속도로 터널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는데 대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재한	"한 걸음 물러서 주세요."는 승객이 안전선을 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니 어찌 괘씸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준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에 관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동희	고속도로 교통혼잡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강대성	제주도를 해저터널로 육지와 연결해 경제 도약을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동희	골목길 반사경 의무 설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입법 추진이 필요합니다.
황진성	운전중 교차로 신호가 진행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불안불안 하게 지나야 하는지....
이동희	고속도로 진출입 시간 기반 요금 부과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김기영	보행자 우선의 도로교통체계 확립,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영호	왜 동두천 연천행 1호선은 운행차량이 몇십년째 증차되지 못하는 건가요?
이지형	도로위의 무법자인 대형차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박준태	도로위의 표식은 모두에게 편리한가?
김미경	보도블럭이 오히려 걸어다니기 더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박용진	신호등 시각알림을 만들어 놨는데 왜 사용을 안하지?
정윤현	공공 킥보드는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요?
윤동진	신호등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는가?
이혜선	출국검색대 직원 증원과 전세계 모든 공항에 다 적용되는 proirity line 을 만들어주세요.
김석영	사회의 필수적인 공공재인 시내/광역 버스 시스템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정호	자동차 최고속도 문제 없습니까?
최윤석	왜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타지 못하나요?
정진호	지하철 연장은 왜 이렇게 힘든가요?
원제석	지역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에서 서로 소통하고 풍경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
구준표	윤석렬이 집권후 한 일 택시비인상으로 벌어진 일들?
김형민	기초(general aviation)무시하면서 항공 수준이 향상되길 바라나요?
마성영	지하철 내부 스크린을 직관적으로 바꿔주세요.
김영호	왜 동두천 연천은 전철의 증차만 하면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는데도 몇십년째 열차의 증차를 의도적으로 뭉개고 있나요?
강부권	동해안 지역 교통망이 안 된 이유는?
김희성	도로공사만 하면 패이는 [웅덩이]들 어찌 안 되나요? 시민이 검수하는 공사이길 바란다.
이상민	교통신호등 청적색의 정의를 가부에서 우선통행 권리로 바꾸자

정승일	경계지역의 대중교통 체계의 불합리한 피해를 계속 견뎌야 할까요?
임도영	고속도로 요금지불을 하이패스로 일원화해주세요.
이종상	범칙금이 모두에게 같은정도로 효과적인가?
김태형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과 신규 고속도로 10년 20년 후 무슨돈으로 이 많은 도로를 관리할 수 있나요?
박하나	왜 우리는 안전을 위협받으며 대중교통 출퇴근을 해야 하나?
이인학	(교통) 길거리 장애물이 흉기가 되고 있어요
김남준	왜 우리 동네는 마을버스가 생기지 못하는가?
장경수	항만 고속도로 등과 같은 사업을 꼭 민자사업 형태로만 진행해야 하나요?
조용필	왜 지방에는 민자ㅇㅇ이 많은걸까요?
김훈섭	대한민국 기간산업 인프라 구축에 민자고속도로 외국인 자본 대신 연기금 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민	특수 장비에 대한 오래된 과적 단속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예외 규정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미	지금 과적 단속 기준 현실을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진재호	나들목에 설치된 색깔 유도선, 색맹을 위해서 동그라미, 세모 등의 모양이 함께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진	서울처럼 교통카드 한 장만 가지고 다닐 수 없나요?
최만석	보행자 신호등 체계 안전하게 보완해주세요.
안수영	효성역 언제 생기나요?
김대용	관할경찰서에서 도로상에 PE드럼통을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해 설치하였다는데, 도로법 상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정경진	전국 도로의 차선 표시 도색에 쓰이는 페인트질이 좋지않아 비나 눈이 오면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명식	인천공항 출국장의 시큐리티 출구를 개방형으로 개조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되게 부탁합니다.
황종락	도로나 인도 시설할 때 교량 공사처럼 담당자 실명 현판을 설치가 필요합니다.
양홍석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단속을 버스전용차로 단속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되는지요?
양홍석	도로주행 속도를 10키로씩 만 상향조정해도 교통체증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책은 없는건지요?
김영환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 경계석 턱이 높아요
서은미	차선이 잘 안 보입니다
이동근	고속도로 속도제한 문제. 언제까지 100km/h?
이진구	미성년자 킥보드 사용할수 없는 근본적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찬식	서울 지하철을 좀 더 편리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 없나요?
서인찬	무분별한 도로 표시봉 설치에 엄격한 규정과 감독을 요구합니다.
최용준	세림이법 같은 안전 관련법은 왜 느슨하게 운용하나요?
유지문	서울 지하철을 없애고, 지하 자전거로 대처하면 안되나요?
이용현	대중교통이 AI와 자율주행과 24시간으로 그리고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지역들의 어떻게 활용 할 수 있는지
서진희	교통 인프라는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인구가 적으면 사업성이 없다는 걸 잘 알지만 관광용 산악철도나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에 투자하기보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개발에 힘쓰면 안되나요?

주거 환경

이은정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견제 장치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주우정	왜 건설사 아파트 원가 공개를 하지 않는거죠?
김영호	왜 공공주택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층간소음을 법으로 금지하지 못하나요?
정재도	아파트 (공사입찰등) 비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성민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심합니다. 오토바이 검사 시 소음 검사 의무화 같은 제도 없나요?
이현구	오토바이 난폭 운전과 소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안기준	아파트 후분양제로 전환해주세요
차세화	배달오토바이 소음 문제는 왜 방치하는가
손미옥	층간소음 - 아파트를 잘 만들면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놀 수 있지 않을까요?
박준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오은희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언제쯤 어떻게 뭘 해야 해결이 될까?
한겨레	왜 아파트는 30년이 지나면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합니까?
박은영	거리에 넘쳐나는 현수막 제한 할 수 없나요.
김혜진	버스 탑승시 음료는 제한되는데 그래서 특히 번화가 인근 버스 정류장에 음료쓰레기가 넘쳐날 때가 있어요. 정류장에 음료 분리배출하는 시스템 만들면 어떨까요?
조재민	우리나라에서 입법, 사법, 행정 전권을 가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문제를 강제할수 없을까요?
최진아	거리에 넘쳐나는 비방 현수막을 제한할 수 없나요?
하미선	아파트를 분양받고 사용자 실수나 잔잔한 하자보수 말고 외벽 누수나 창틀 누수 그리고 결로현상에 대한 하자보수는 최대가 왜 5년인가요?
이상준	아파트 분양은 왜 선분양으로 해야만 하나요?
은준기	심야에 부족한 전기를 충당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안입니다
김영환	교도소 군공항 등 기피시설 어디에 둬야하나?
이승철	민주노총의 확성기 소음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은 제재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라
이경철	청년 주거환경 개선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제안 드립니다.
JaKe-pm8tu	강남이라서 사람들이 살고 싶을까, 아니면 인프라가 모여 있기에 살고 싶은 것일까?
한정엽	튜닝 차량및 오토바이 소음은 왜 안바뀌는가?
구태원	이제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두희	언제부터, 그리고 왜 우리에겐 '아파트' 말고는 선택할 주거 공간이 없게 된걸까요?
김정은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놀이공간은 어디에 있나요?
천보석	부산에 수많은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수정	우리가 주거에 대한 큰 불안 없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이준영	건설사의 잘못된 건축으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 국회의원님들은 왜 방치하나요?
김현주	정신없는 간판들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석민	플랜카드 좀 그만걸면 안되나요?
김세진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싼가요?
김진수	마을 골목길 눈은 누가 치워야 하나요?

신의철	거리의 어지럽고 산만한 간판들 예쁘게 정돈은 어렵나요?
김정남	한전에서 아파트와 계약할때 단일계약을 하고 입주민에게 부과할때는 종합계약방식으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을 법제화할 수는 없을까?
박지원	소음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거환경권 침해를 막아주세요
박찬식	전국 아파트 관리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교할 수는 없나요?
박찬식	아파트 관리비 적립금 관리 문제 없나요?
안병혁	장기 전기 구성 방향성 전략 수립 방안이 필요합니다.
김민정	왜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비를 농협이나 은행에서 받는건가요?
김경수	공동주택(아파트)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을 대의(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입주민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는 없을까요?
박찬식	길거리 도시미관을 해치는 플랑카드나 현수막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김경연	아파트 부정 비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없을까요?
신동호	주택 의무 화재보험가입법을 제정하면 안될까?
지완진	다중이용시설 공조기(=공기조화기=전열교환기=환기장치) 점검 · 관리 법적 강화 ,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확대를 제안합니다.
정정원	서울에서만 5년간 957건, 싱크홀 문제 정말 안전한가요?

지방균형발전

김지혜	지방은 언제까지 소외되어야 하나요?
황정선	육군 사관학교를 새만금 이전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정규	사라져가는 지방 이대로 두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역 야구, 축구 단의 모기업들의 본사가 그 지방으로 가면 나라가 균등하게 발전 할 수는 없는걸까요?
홍창현	우리는 왜 원하는 곳에 살 수 없고 서울로만 향하는가?
정유경	왜 민주당은 전라도의 인구소멸에 무관심한 것인가?
이동희	전국 자연경관형 농촌 활성화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신혁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노력 늦었지만 빨리해야하지 않을까요?
안성남	왜 도서산간 지역은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최재문	대한민국을 균형발전하겠다 하지만 결국 수도권에 집중하는 정책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세윤	마을 발전기금 강요를 막아주세요.
김귀옥	인구소멸 위험지역 1순위인 충북 보은을 살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종진	인구소멸 지역의 빈집, 휴경지를 대도시 거주인원들에게 무상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어떨까?
안도영	서울시 인구를 줄이는 것이 서울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입니다.
김기웅	수원 군공항은 언제 이전 할까요?
김원희	도시와 달리 농어촌에서는 집 근처에 국도, 관광지가 생겨도 개인 자산 형성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윤상필	지방의 폐가를 살리고,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꿈일까요?
박용채	귀촌을 지원하는 지자체별 정책을 한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황정선	1.용산공원 부지 중에 일부 지역을 임시 버스터미널로 만들고 하면은 /2.용산공원이 만들아진다면 거기에 트렘을 설치히는 것은 어떨까요?
김동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치적, 정책적 구상 및 방안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고민일 절실합니다.
조민경	서울집중화는 왜 계속 강화될까요?
선은미	인구 소멸 위기 지역과 노동 시장의 재 진입을 희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공존을 위한 공생 방안
이상호	심각한 농촌의 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박지민	청년들의 시골살이 도전이 좀 더 쉬워질 수는 없을까요?
이수연	지방이탈 인구 감소, 지방으로 기업 이전 하루 아침에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거주자 재택근무활성화가능한 산업군들을 분류해서
	국가에서 컨트롤 할 순 없나요?
이유	지방 소멸 특이점 지났나요?
이수영	인구소멸지역을 장애인 친화도시로 조성하면 어떨까요?
주경문	농촌 및 구도심 폐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유선희	10년 후 우리마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김지영	현지인과 외지인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농촌의 폐쇄성이 보수화를 만드는 이유. 그 해결책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조희정	소멸도시 부산의 해법은 무엇인가?
방성정	수도권에 인구, 경제 집중화 현상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지방과의 상생발전 및 도시/농촌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지속적인 국토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
안기돈	지방소멸을 위해 세종시로의 수도이전은 도움이 될까?
장선영	농촌에는 왜 도시가스가 없을까요?
신현주	저는 인구 소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김판석	살고 싶은 지방 도시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김태희	왜 경기도 양평은 이리 낙후 되 있는 걸까요?
이민수	농업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전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요?
김선중	대부도 지역 수도물 공급해주세요.
김미정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살고 싶지만... 가장 큰 망설임의 이유는 병원입니다.
이상석	말과 글로만 존재하는 듯한 지방 소멸에 대한 대책이 현실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경진	광명 철산주공 공공시설 사유화가 개선이 안 된다.
박찬식	한강의 랜드마크로 문화공간으로서의 인도교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김세진	청년 중심의 귀농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요?
조희정	전투형 노무현 이재명은 부울경을 산업수도로 재도약 시킬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있는가?
서진희	왜 인구수 기준으로만 정책을 펼치고 지원하나요? 약자는, 지방은 계속 뒷전입니다.
이승용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 혹은 군, 면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당 지역 인구를 늘이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개인의 교통수단

박용진	경유차 5등급 기준이 뭔가요?
박진우	아파트 주차 문제는 누가 해결 할 수 있는가?
이강준	주차금지구역 단속은 민원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김두영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왜 보험사 마다 틀리나요
문성균	거주자우선주차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진득	관공서 주차장을 휴일에 개방하면 안 되나요?
이선희	오토바이 번호판은 앞에 있을 수는 없나요? 초등학교 앞 신호등을 그냥 지나쳐 가서 질문합니다.
이강준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전동기기에 왜 번호판이 필수가 아닌가요?
이강준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 필수 정답 항목 적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김양택	자동차 보험 이대로 괜찮을까요.
정영준	도시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차난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요?
임국현	비어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새벽 시간에 주차하면 안 되나요?
한승진	교통사고 특례법 계정을 바랍니다
박미란	아파트 주차난을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최환석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공간 선확보 후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류형근	우리나라도 차고지증명제가 필요합니다. 왜 도입이 안되나요?
류형근	아파트 빌라등 공용주택에서의 주차문제 해결 안되나요?
허정수	우리나라 도심의 자전거도로를 더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김상현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희	자동차 보유세가 왜 집 보유세보다 비쌀까요?
김철규	졸음쉼터에는 왜 전기차 충전기가 없나요??
김순옥	상가 건물 주차장을 창고로 이용하는 건물들이 있는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병옥	화물차가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박지연	불법주정차는 할 수 없도록 법 개정 요청드립니다.
김태형	공용사유지 주차법이 왜 해결안되나요?
박규희	도시에 왜 자전거가 필요할까요?
김원희	자동차 전조등 개선할 수 없나요?
김성훈	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과 급증하는 이륜차 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 계획

김성빈	왜 믿고 살 수 있는, 하자 없는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는가?
권기남	신도시를 계획할때 대중 교통망을 미리 계획하고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서비스는 고려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송민석	건설노조의 불법적 행태는 끝난 건인가 다시 시작될 것인가?
김용남	광주 화정동에서 인천 검단에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안전한 건물을 짓고 유지하기위해서 우리가 가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경호	지하 개발의 비용은 언제 어떻게 청구 될까요?
임종혁	20평 이하의 작은평수와 면 단위 이하의시골에는 흙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법의 예외 규정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윤섭	불필요한 신공항 등 토목 공사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봉희	하늘은 몇 미터까지 소유권이 있나요?
김만영	왜 한국의 건축물에 화재가 나면 유독 가스에 의한 인명 손실이 반복되는가?
김현수	산업안전, 건설안전에 대한 질문, 사업주의 처벌만 더 강화하면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민영	신도시에 왜 종교부지를 줘야하는가?
박승원	새로운 주택 정책 - 저가형 신도시에 관해 의견을 드립니다.
조종례	신도시는 계속 만들어야 할까요?
김명숙	3기 신도시 분양 원가를 공개 촉구합니다.
이경철	동네에서 인기 좋은 일반인이 하는 재건축/재개발은 정상적인가?
최대식	수많은 국민이 죽는 안전 사고 근본 대책은 없습니까?
원훈희	국가가 발주한 소규모 공사(관공서)의 안전관리 방향에 대해 제안합니다.
박진형	건축물 감리제도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형수	아파트외의 건축물들도 안전 등 삶의질을 높일수있는 부분들에대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규제가 강화되었으면합니다 가능할까요?
이진호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중 추정분양가 대비 본 청약 분양가가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송병기	빌딩 비상계단을 경사로 형태로 만들면 안될까요?
장천석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하동지사의 엉뚱한 측량으로 맹지가 되었습니다.
지완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 있는 건축물_수돗물 음용률 확대 제안
채재경	전문건설업은 왜 공동도급 허용 안해주나요?

노동 및 고용

노동의 가치

조재영	나는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서세종	주휴수당 제도 너무도 악법같은 제도 입니다. 왜 아직도 유지하는 걸까요?
김정훈	각계 전문가의 은퇴를 늦춰주세요.
김완기	A.I 시대에 정말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다면. 그 직업 종사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박성한	대한민국 근로자의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개시전까지의 어떻게 버텨야하나?
김대중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너무 늦어요.
정우진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선 이 사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상백	날이 갈수로 노년층이 늘어가고 폐지를줍는 노인들이 늘어가고 노인 빈곤율이 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인간은 언제까지 노동을 해야
	할까요? AI가 인간을 대신해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임준영	택시기사 직업에 대한 낮은 인식, 택시 기사 직업에 대해 사람들은 하찮은 직업이라 생각하고 대할까요?
정신환	취업지원관은 직업계고에 도움되는 직업인가?
강동현	이제 50세에 들어서는데 이제 뭘해야 먹고 살수 있을까?
김은주	퇴직연령을 늘여야하지 않을까요?
강수한	왜 감정노동자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가?
이은희	20대청년들 취업 인턴제도, 청년취업 인턴제도 이대로 괜찮은건가요?
곽준규	로봇과 ai는 현재의 거의 모든 직업을 대체를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지구촌 친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직업이 될 수 있을까요?
계민석	40대 중후반 인생 리셋이 가능할까요?

신도겸	억지 정년 60세, 30년 넘게 엔지니어로 살아 왔고 아작도 여전히 젊고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년을 맞았고 나이로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서회적으로 큰 손해가 아닐까?
김정순	정년퇴임 70세 연장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주형	우리는 언제쯤 주4일제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김영호	왜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업들은 운전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수당을 똑바로 안 주나요?
김희정	3년간 일한 남편이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회사대표가 회사를 두개의 이름으로 번갈아가며 급여를 줘서 연속성이 없다고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노동자편이 아니더군요.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성인택	노동자가 긍지를 갖고 살려면
김영환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행복한가요?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강화하나요?
모찬우	남들과 똑같이 노력해서 장사하고 있는 나는 무엇을 잘못 했길래 여유있는 삶을 살지 못하나요?
이흥섭	노동시간보다는 나와 일이 하모니가 이뤄지면 밤새서라도 즐겁고 결과물이 보람있다면 좋죠. 개인의 적성에 맞는 일을 어떻게 연결해줄 수있을까요?
배춘환	저는 아들을 셋이나 키우고 있고 살림하고 눈오면 집앞 눈도 치우는데 왜 소득이 없나요?
장다운	노동계에서 왜 현장전문가의말은 탁상공론에 무너지는가
정기독	정년 퇴직이 왜 나이를 기준으로 있어야 하지요
최계영	희귀병 환자와 가족들의 일상을 지키는 것에 기업과 사회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복지사각지대)
김범석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을까요?
김미숙	50대이상 여자는 왜 경력과 학력무시하고 일할수있는 직장이 요양보호사나 청소직뿐인가요?
김민준	저학력이라고 해서 불리하지 않고, 일자리에 있어 차별이 없어지는 국가 어떨까요?
남재하	인공지능으로 생긴 노동의 잉여 시간을 인간이 향유 하는 것은 정당한가?
전종일	지금은 더 일해도 모지랄 시국아닌가요? 4일제든 4.5일제든 기초 경제가 튼튼해 지고 나서 생각해봐도 될 문제 아닐까요?
이순희	이재명 대표의 정치인을 도구로 쓰라는 발언에 반대한다. 뜻하는 바는 알겠으나 정치인이든 누구든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되지 않을까요?
김연재	근무시간 제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윤용근	우리 대부분은 노동을 하고 살아가는데 왜 노동법에 대해선 배우지 않을까요?
김민주	기업에서는 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까요?
박상규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 채용 시 왜 호봉이 낮은 분들 위주로 채용하나요?
윤승완	사업자(사장님)들을 보호해주는 법은 없나요? (노동법 관련 질문)
김신용	언제까지 경찰을 싼값에 이용하려 하나요?
오홍영	기본소득을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게 일을 찾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이동현	정년 연장은 언제쯤 확정 되나요?
이성욱	개인의 잠재력을 지원하는 미래권리 시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김성구	대기업 근로자와 소기업 근로자의 인권은 왜 다르게 적용되는가?
김봉학	자영사업의 몰락의 시대, 종사자들은 어떻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김진영	직업의 귀천이 어디있니라고 가르치지만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을까요?
김현미	50대에 좀 더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점은?
정진욱	60세 정년퇴직을 현실적인 연령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윤성혜	4일제 근무와 파트타임 수입의 격차는?
이기선	50대에 회사를 나가고 이후에 어떤 수입도 보장 받지 못하는데 왜 계속 그리고 평생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할까요?
민성웅	40, 50대 조기 퇴직 후 재취업은 왜 어려운가요?
송병문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여 노동의 가치가 사라진다면 자본주의는 기능할 수 있을까요?
최주연	주4일제 근무 시 교대근무자 아이돌봄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은?
이시현	청소부와 같은 직업이 의사, 판사 변호사처럼 인정 받을수는 없는걸까요?
jheartu7036	왜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일까요?
헤이즐넛-o1h	직업에 귀천이 없고 돈으로 계급이 나뉘지 않는 세상이 올까?
lv0gun9	AI와 로봇 기술 발전이 단순 노동자를 대체하기 전에 우리 사회엔 어떤 안전망을 준비해야 할까
lamoon536	월화수목금토일의 순서에서 자유로워지면 어떨까요?
정세나	우리는 왜 노동을 부끄러워하고 폄하할까요?
서경태	과거에는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몇일 부터 1년 정도까지 신입 사원 교육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없어졌는데 정부에서
	강제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요?
박상은	AI 시대의 취업률과 복지에 대한 고민은 준비 중인가요?
진화영	어린이집 교사는 왜 고강도 저임금으로 일을 해야 하나요??
김백민	자신이 행복한 직업을 행복한 만큼만 하고 살 수 있게 국가가 도와 줄 수는 없나요??
김준석	주4일제는 불가능 한가요? 점진적인 4.5일제 실행도 불가능한가요?
권영기	AI시대 주4일제? 그러니까 주3일제 합시다!
김은영	언제쯤 돈을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많아질까요?
이화란	AI로 인해 인간의 노동 없이도 생산성이 폭발하게 될 텐데, 그때에도 인간은 노동을 하고, 세금을 내고, 출산을 해야만 국민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가요?
김영환	몇살부터 노동을 해야하나? 장애인 및 청소년을 위한 노동 환경은 조성될수 있는가?
나승호	노령인구 우선고용에 관한 좋은 정책을 기대합니다.
민윤	장애인 채용과 관련하여
민윤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김종현	청년들의 역량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김현주	의료계 온콜 근무 언제까지 열정 근무로 가나요?
도용호	[외교.국방] 강제 무급휴직, 트럼프1기 때 한국노무단요원들 많은 비중으로 무급휴직을 2개월 15일간 당했는데, 한미행정협정상 그
	인원(2185명)을 추가하고 인원수 줄이는 행위는 양국 정부 합의에 의해서 결정 되지 않나요?
이대성	영세 소상공인의 근로기준법을 예외 조항으로 하여 서로의 자율의사에 맡기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형동	직업 정년제 폐지는 가능한가요?
김태현	주4일제 하기전에 대체휴일 임시휴일 5인이하사업장
김철산	공적연금 지급시 근로소득자는 차감 지급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되는 제도는 불공평한거 아닌가요? 개인사업자도
	소득에 따라 차감되도록 하는게 형퍙성에 맞지 않을까요?
김지열	주4일제 근무, 이재명정부 출범하면 바로 시행부탁드립니다.
이성미	장애인 일자리 공략들을 보면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것들이 많은데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직업교육과 취업을 할 수 있는 정책은 없을까요?

서희정	주4일제가 적용될 경우 어떤 정책을 생각하시나요?
이형언	퇴직금 산정 방식 바꿔주세요.
윤성원	왜 한국의 디자이너들은 일찍 이직, 퇴직할까요?
이영섭	경증장애인의 취직 및 급여제도는 개선될 수 있을까요?
신현주	이재명 대표의 주4일 근무 정책에 관하여
김홍철	어용노조로 확인되는 노동조합은 법으로 제한해서 해당 위원장및간부들을 처벌할수 있게 해주기길 부탁드립니다.
편선화	항공기 승무원은 운동화를 신고 일 하면 안될까요?
윤경숙	사직서 제출을 왜 회사에 승인을 받나요?
최지수	50세가 넘으면 취업이나 새로운 직업을 가질수 없나요?
유성귀	노동 식민지 만드는 거 어때요?
조정희	다가올 AI시대의 일자리 걱정?
이정원	주5일에서 주4일제 시행을 앞두며...
정윤희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글, 왜 글값은 제 값을 받지 못하나요?
김영범	노동과 인권-거부할 권리, 노동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김철	우리가 AI를 고용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형근	AI시대에 경계선지능은 어떻게 살아야할까요?

근로 환경 개선

김양현	노동 계약의 완전한 패러다임 변화는 불가할까요? 최소 시간을 합의하고 추가 근무를 노동자가 선택하는 방식은 안되나요?
유혜림	노동시간에 대한 고민, 노동시간이 늘어난다고 진짜 회사에게도 이득일까요?
이진우	우리는 왜 아직도 하루 8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나요?
서세종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건 어려울까요?
현은진	엄마들은 워킹맘과 전업맘을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가?
김범중	주52시간 예외 관련 연구자들 대우를 늘리고 R&D 예산을 늘리는 것이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권은정	왜 우리는 대부분 9시부터 6시까지 일해야 하나요?
이재현	배달 노동자는 언제까지 일을 해야하는가?
정명남	야간 근무시간 관련, 동절기에는 야간근무시간을 20시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굼합니다야간근무
경민선	회사에서 짤린 싱글맘 어떻게 살아야하나?
조봉국	야간 아르바이트는 왜? 추가 수당이 없나요?
김성기	공정한 인사 가능한가?
이동희	근로개선 출퇴근시간보상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방안이 될 것입니다.
홍승일	한국은 노동생산성 개선에 왜 노력을 하지 않나요?
이송엽	국회의원도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하는데 국민은 어떻게 노동시간을 보호받을수 있나?
이지환	육아휴직 제도 지금이 최선일끼요?
김영훈	토일에 왜 일하는가?
이원영	직원 1명인 작은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여타 다른 근로자들처럼 주말휴무를 할 수 없나요? 왜 모든 노동정책들은 가장 낮은곳까지 오지는 않는가요?
오은경	동물복지 인증은 있는데 노동복지인증은 왜 없나요? 왜 생산이력제에 노동환경은 빠져있나요?
엄태훈	환경미화원은 언제 중 5일 근무를 할수있을까요??
이은주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 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나요?
김은영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의 부재가 있다면 당연히 남아있는 인원들을 위해 대체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것일까?
신경철	주 4일제보다 9-5가 어떨까요?
오세진	주 4일, 대체공휴일 끼여있는 달에는 직원월급주기도 빠듯합니다. 자영업.소상공인 다 죽으란건가요?
윤훈섭	왜 경영자가 실패하면 노동자만 고통받아야 하나요?
여기락	최저가로 입찰로 수주하는 건설 공사에서 근로자들의 생명이 담보될 수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효신	현재의 농업보조금정책은 한국 농림업의 미래를 보장할수 있을까요?
민동우	택배에서 착불은 금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임재흥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내 계급 체계속에서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처우에도 자동 입틀막이 되어야 한다
김영호	이재명 선출직 공무원님은 지금 대한민국은 일용직 건설인력도 지연으로 채용되는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아시나요?
이상길	OTT 드라마, 방송 드라마 제작스태프에 대한 근로계약 작성은 지킬 방법이 없는 건가요?
최환석	중대재해법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수홍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는 언제 올까요?
임혜주	탄력적 근무 제도가 모든 기업과 전문직 일자리에 언제쯤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정광조	주인공 김성자씨를 경찰 특채로 추천할 수 없을까요?
전혜정	다양한 연령에게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근로 기준법을 새로 만들 수 있을까요? 패자부활전도 논의하고 싶습니다.
1fa1ci1shk	언제까지 이 사회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원하는 것인가? 얼마나 노동자들이 더 죽어야 바뀌질 수 있는 것인가?
sini4974	(라이더 배달)배정 기준을 숨겨야 될 이유가 뭘까요?
강성구-d9t	일상의 한 축이 된 배달, 배송이 노동으로 정당하게 평가돼야 죽음의 질주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오세훈	교정직 공무원들은 왜 불행한가요?
이영용	근로시간 단축 이야기만 나오면 자영업자 사장들의 지지표가 떨어져 나가는것 같아 불안합니다. 탄력적 또는 직종별 노동시간을
	구분해서 운영이 안될까요?
조봉국	야간 아르바이트는 추가 근무수당이 왜 없나요?
서경태	과거에는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몇일 부터 1년 정도까지 신입 사원 교육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없어졌는데, 정부에서
	강제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요?
고병욱	IT프로젝트 오픈은 왜 연휴에 할까요?
조봉국	아르바이트도 노동자인데 왜? 야간 근무수당이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나요?
김화성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박정영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년이 주어질 수는 없는 걸까요? 왜 특정 직업에서만 안식년이 있는 걸까요?
유창재	미래에도 현재 기준의 노동력이 필요한가?
남상욱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죠?

주선영	육체노동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공부못해서 천대받는 죄인 대우 받아도 참아야 하는 사회가 당연한가요?
정희선	유급 육아휴직10 18개월로 확대되었으나 부모 무도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일봉	일반 직장인들 (자영업까지 포함) 생각해 보면, 본인들의 본업에만 집중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요?
이운봉	현재의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은 장기 근속자에게 매우 불합리하다
류지범	미추홀구 육아휴직 장려금 검토 말고 실행을 해주세요
김신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아이들이 좋은나라에서 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게 해주십시요
김명환	임업분야도 향후 개선할 사항, 수정할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기계톱에 대한 위험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김승리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유현희	2030세대에게 공단 제조업이 매력적이려면 어떤 복지가 필요할까요?
권낙준	주4일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건설현장 근로자는 주6일(간혹 주7일)일해야 할까? 사망사고도 주말,공휴일에 많이 나는데 쉴순 없을까?
김장환	해고가 지금 보다 쉬워지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심주희	조속한 주 4.5일제 도입으로 아이들에게 부모와의 시간을 돌려줍시다
안태준	저녁이 있는 삶, 주말 있는 삶을 맘편히 영위 할 수 있는 세상은 없는 것 일까요?
윤경숙	근로기준법에 사직서에 대한 내용이 없는 이유가 뭐죠?
김근래	재택근무가 활성화 되도록 정부가 지원줄 수는 없나요?
박건혜	언제까지 대가없는 야근으로 착취당해야하나요?
이동회	9시출근 18시퇴근제를 탄력시간근무제(출퇴근시차제)로 바꿀수 없나요?
이동욱	근로 시간의 범위에 대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득명	노동자들의 적정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면 합의할 수 있을지 합의하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할지 질문합니다.
남경준	출산휴가와 육아 휴가를 좀더 확장했으면 합니다
박신안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요?
김무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의 차별적 적용에 분노합니다.
김두리	야간 편의점 운영 문제점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미혜	폭염기간 야외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행을 위한 사회적 프로토콜과 정책 마련 방법은?
장병춘	가사노동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전업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면 어떨까요?
지완진	산업안전보건법 125조 작업환경측정과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문제에 대한 제언입니다.

일자리 보상

오대환	단체 협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전경열	해군과 해경의 급식비가 왜 달라야 합니까?
김도연	포괄수가제.포괄임금제 없애는 방법없을까요?
박현정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평등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환경에서 왜 유일하게 차별을 받는 직종이어야 할까요?
김승수	진실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은 늘 외면과 이용대상이될까요?
김도연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자의 임금 상승에 걸림돌은 아닐까요?
이상호	당신은 능력자 입니까? 능력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나요?
변휘원	소수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배는 더 열정을 쏟고, 땀 흘려 일하지만, 정해진 월급은 항상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당한 일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매번 발생되는 걸까요?
김혜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왜 안합니까?
노성만	임금 체불 발생시 조사관이 정확히 판단 했는지 교차 검증 할수 없을까?
최가라뫼	왜 관리자가 실무자 행세를 하는 걸까?
권의빈	자신의 역할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시는 분들이 대우 받는 세상이 될 수는 없나요?
김성준	매항공사 임금피크제도가 달라요. 단일하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김원희	고용문제와 직장내의 서열화의 해소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김지윤	반영구 화장 문신사 타투이스트들이 당당하게 영업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나상훈	연변출신 간병인의 처우는 왜 이렇게 비인간적일까?
김동준	삶의 목표처럼 벌어야 산다. 하지만 벌이에 많이 차별 불평등 그리고 온갖 범죄로 벌기도 합니다.
김신웅	왜 노동조합 운동이 필요할까?
윤동환	강력계 형사 처우 개선 계획이 있나요?
배재훈	한국의 택시의 미래 생각해주세요.
김연식	경찰개혁, 노동조합 설립 없이 가능할까?
김영호	왜 일용직에 대한 매년 최저일급제도를 안 만드나요?
박서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김영호	왜 군인을 정년 65세까지로 안 바꾸나요? 군복무 인구도 부족한데 예비 현역전역병 몇백만 명을 왜 활용을 못하나요?
김성종	포괄임금제,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김서연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파견,계약)가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급여 받아서 내집마련이 가능할까요?
천명기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반영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대우	포괄임금제도로 고용이 위축되고 무임금 노동을 끌어내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포괄임금제도를 개선하면 고용이 늘지 않을까요?
강대삼	로봇,AI로 인한 일자리감소와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송희정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을 왜 막지 못하나요? 의지는 있으신가요?
김우종	수백 대의 경쟁률을 뚫고도 합격하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전승일	건설 현장에서 직접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급여일은 언제인가요?
강대삼	로봇, AI등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소득 불균형으로 빈부격차의 심화가 걱정되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재이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는것이 왜이렇게 어려울까요?
jheartu7036	왜 한국 여성은 동일 노동을 해도 남성의 70%의 월급을 받아야 합니까?
한은희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수준과 소득수준에서 최저임금은 적정한 수준일까요?
송세나	조직에서의 승진은 공동체가 정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이정우	하청 노동자는 도급 계약의 몇%를 월급으로 받으면 적당할까요?
공영철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을 좇아 갈 수 없다
최은경	왜 생산직은 시간이 지나도 임금이 작을까요?
김경욱	변호사 번역공증과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가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적어도 관공서에서만이라도 양 쪽 모두를 당연히 받아 줄 수는

	없을까요?
백종식	정년 연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도는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승문	왜 연장 근무를 해도 수당을 못받을까요?
박준영	군인.경찰은 공무원이고 왜 소방관님은 공무원 아닐까요?
박성규	노사협의회 제도는 꼭 필요한가요?
정윤정	우리나라 노동법엔 왜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나요?
임영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촬영장 스태프 처우 개선 필요합니다.
배혜정	노동자의 임금은 사라지고 국가가 대신 벌금을 받는 현실, 임금체불 처벌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성원	대학 교직원은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준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이들, 과연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 있을까?
김도연	포괄임금제를 수정하거나 없애는 것이 최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유미	한국어 강사의 처우는 언제쯤 개선될까요? 개선되기는 할까요?
추용수	중소 중견기업의 노조 가입의 현실적 문제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손정한	남들이 기피하는 직종의 급여는 왜 가장 낮은가?
강윤경	갑자기 대체휴일을 지정하면 사업주의 부담은 누가?
조윤희	주휴수당에 대해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용	근로자? 노동자?를 위한 협동 조합은 왜 없나요?
김새롬	마트 휴무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논의를 할 때 왜 마트 노동자는 부르지 않았을까? 정책을 결정할 때에 관련한 이해당사자를 모두
	참여시키고,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문화는 어떻게 정착될 수 있을까?
차성훈	롯데백화점 명동영플라자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눈치보지 않고 연차휴가 쓰고싶다!
서주영	최저시급은 올랐는데 왜 알바비는 확 줄었을까요? (feat.주휴수당)
이화향	최상과 최하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
고정진	노조에 대한 혐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허세민	산별노조의 필요성은?
김영환	노조의 쟁의권은 왜 꼭 임금에 대해서만 발생 하나요?
주관중	주급제를 실시하는 것이 봉급쟁이들 기분도 업되고 덩달아 소비도 늘어나서 내수경제도 살고 일거양득 아닌가요?
심동철	일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법?
함인호	최저임금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노동안정성

남현철	왜 거미줄처럼 비정규직을 이대로 방치하는가?
김창수	중간착취방지법 언제 통과시키실거에요?
김시원	파견고용에 대한 질문,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김성애	신분제의 부활인가? (정규직과 계약직)
이재혁	특고는 4대보험은 다 내라고 하면서 근로자 인정은 왜 못 받을까요?
곽준규	직업, 해직에 대해 시민의 사회적 안정망이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정부의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정우	차별만 남은 특수운영직! 취약계층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없을까요?
이명대	비정규직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오슬기	상식적으로 안정적인 정규직 보다 불안정적이고 힘들고 위험한.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최소한 임금은 더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정용교	용역과 과도한 수수료 문제 사회적 착취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나요?
이승규	인생2막을 열고싶은 4050 중장년의 꿈은 그저 개인의 문제일까요?
오세윤	우리 사회에서 계약직에 대한 제도 개선은 언제 쯤 될까요?
안지호	언제까지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할까요?
황제정	왜 용역직(파견, 도급)을 포함한 비정규직이 계속 유지 되고 있을까???
김영호	왜 사기업들에 대한 정직원채용법을 만들지 않나요? 왜 불법 하청을 방치하나요?
이은주	많은 사람들이 취업난에 시달리는데, 정작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업무에 번아웃이 옵니다. 왜 기업은 여러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분배하지 않나요?
박정현	현행 노동 제도(정규직과 비정규직 등)는 헌법에 부합하는가 ?
김영호	일용직 인력에 대한 직접채용이 아닌 인력하청을 법으로 금지할 수 없나요?
김영호	택배물류 일용직에 대한 해당업체의 직접채용을 법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김신웅	여러분 모두 비정규직인데, 일자리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김신웅	누구는 의대 가고, 비정규직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기영	왜 좋은 일자리가 없을까요?
김신웅	비정규직 임금 더 주기 - 정규직 약화, 일자리 양극화 해결, 부의 재분배, 다양한 가치 증진
유경완	알바 시장에서 3개월 단기계약을 통해 계약금을 주지 않고 내쫓는 행태, 정말 막을 수 없는 걸까요?
박상호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신고가 합법적인 것인지 알고 싶고 고용주는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근로자에게 부담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고
	세무사들은 왜 앞장 서서 이런 일들을 꾸며 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종호	우리나라에 계약직은 필요한 부분일까요?
강경민	비정규직을 정규직 대비 최소 1.5배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정규직이 유리 하도록 법제화 하여야 젊은이들의 미래가 보일듯 한데 ?
김영호	왜 일용직 인력업체에 대한 일당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법으로 똑바로 못 만드나요?
김영환	자격증은 얼마나 필요한가?
진창훈	용역 파견 일용직 업체의 수수료 너무 높지 않나요?
유진호	채용 없이 사람들만 혹사시키는 나라와 회사는 언제 바뀔까요?
전화영	IMF 이후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도급사 문제는 언제쯤 없어질까요?
조덕호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연금을 만들면 안 될까요?
황인현	현대판 홍길동! 대한민국 공무직(구 무기계약직) 이대로 좋은가?
김강완	왜 우리는 끝없는 생계 부담과 미래 불안을 안고, 무리한 창업과 과중한 노동에 내몰리는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김은경	'2년 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우리 조직과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김동혁	도급법상 분리기준이 궁금합니다.

서경태	IMF 사태 이전에는 비정규직이나 노숙인이란 단어 조차 우리 사회에 없었습니다. IMF를 졸업한 후에는 IMF 이전으로 돌아가서 비정규직이란
	제도가 없어져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비정규직과 노숙인이 있을까요?
정재욱	비정규직은 언제쯤 없어질까요?
박민규	코레일네트웍스 상시지속업무 현장노동자 원청인 코레일 직접고용 전환 될수 있나요?
최강석	정규직이지만 실직적인 비정규직인 공공 또는 공공기관 전산 외주 노동자들도 살펴주세요.
이미정	고용보험을 납부를 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부당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합니다
한승협	경력단절 가산점을 제안합니다.
유동수	기간제 채용의 문제, 편법으로 저임기간제만 뽑는 기관은 없어져야 한다.
김혜인	비인기 교과목 정교사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정철	계약직 근무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조지연	공공기관 에서 만이라도 정규직 채용인원이 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장병춘	공공근로를 노령인구에게 시혜적으로 베풀어야나요?
박창영	2030 실업 문제는 국가에서 강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김정애	실업자 아들이 집에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성원	우리는 왜 강자만 이기는 경쟁의 게임을 원할까요?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이춘은	계약직의 비애를 언제까지 느껴야 할까요?
주병하	우리 나라는 파견직으로 사람을 쓰는 회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준호	퇴직금을 피하기 위한 11개월 계약직 꼼수에 대하여
김현희	무기계약_아웃소싱의 어두운 노동 현실을 살펴봐 주세요.
이종수	나는 더 일하고 싶습니다. 나는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정성찬	노동의 계급과 소득의 격차, 고용의 불안정을 어떠한 정책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장하주	비정규직은 평생 비정규직 이어야하나?
이종수	기간제법의 현실과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빠르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종환	비정규직, 계약직 인력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야 합니다.

근무 여건

양승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언제 입법될까요??
박상우	나이가 항상 중요할까요?
장명진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과도한 수정 요청에 의한 노동력 착취
신준호	화물노동자의 삶을 위한 운송 요금현실화 방안은 ?
김동희	*토론 및 질문* 이 글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든 화물차 운반비 지연지급으로 다 죽습니다.
김영호	왜 대한민국은 국가 및 민간을 포함한 모든 채용시험을 학벌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공개경쟁채용을 못하는 건가요?
임휘진	각종 프리랜서의 안전은 언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선	화물운송종사자의 소득 증대 방안은 무엇인가?
기용도	영업용 넘버가 문제입니다. 월지입료로 300.000원 정도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차처럼 택배 차주처럼 깡통 넘버라도 발행할 수 없을까요?
김영호	왜 군인 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나이제한을 폐지하지 않나요?
홍승욱	택배 노동자 [배송노동, 상하차 노동] 는 언제까지 열악해야 하는가?
김유미	대한민국에서는 직업을 다양하게 경험해 보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김덕수	화물 기사로서 묻습니다.
양영태	택배노동자의 시간은 거꾸로 가는걸까요
이정일	옥상옥 필기점수 상관없이 10분 만에 떨어지는 서울시 공무원 면접 시험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김영호	김영호는 20대 때는 이명박 때문에,30대 때는 박근혜 때문에,40대 때는 윤석렬 때문에 공개경쟁채용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선출직 공무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상우	프리랜서도 노동자로서 보호 받을수 없을까요?
홍희경	이력서 작성 시 나이 표기란이 왜 있어야 하나요?
홍유진	프리랜서직은 왜 4대 보험이 안되나요?
남궁호	해기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병역특례 인원을 왜 줄여야 하나요?
민윤	공무원(일반직)의 수당체계는 왜 안바뀔까요?
이강주	공무원 시험, 경쟁이 아닌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
이강주	승진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경찰 승진제도로 개선해야
구지영	요가강사 프리랜서는 언제쯤 근로계약을 할 수 있을까? 왜 임금은 10년 동안 그대로일까?
이주영	공무원에게 청렴을 강요하지만 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김세진	공무원은 평생직장?
김기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대책 필요해 보여요.
김다혜	건축사 시험은 왜 손으로 제도하는 걸까?
권민정	직업에 대해, 우리는 나의 잠재력을 잘 알고 자신과 잘 맞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예림	프리랜서가 누릴 수 있는 복지가 생겼으면 합니다.
박준태	공무원은 왜 노동자가 아닌가?
전기수	직업에 대한 비밀도 있지 않은가?
임연화	프리랜서도 국민인데 왜 이렇게 불리할까요?
joayo281	이렇게 일하는 저는 프리랜서가 맞을까요?
박동철	화물노동자 평생 헨들 잡고 살아 온 인생. 왜 아직 헨들을 놓지 못하는가? 나의 욕심인가? 나의 아둔함인가?
김덕수	화물 기사로서 묻습니다.
김민지	면접비를 법제화 할 수는 없을까?
곽재욱	프리랜서 또는 계약직은 일부는 급여가 높아야 하지 않을까?
유지문	직업, 가위 바위 보 로 결정하면 안되나요?
이충효	자기소개서에 도대체 성장과정은 왜 물어보는 걸까요?
차성훈	화물 연대는 불법 단체인가요?
차성훈	화물노동자는 주7일 혹은 주6일 근무가 당연한가요?
선우강	프리랜서들 일반대출시 소득기준은 근로자들과 달리 총소득의 6~70%를 적용하는 반면,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 기준은 총소득100%를 적용하고

	있어서 은행에서는 소득이 적다고 대출제약이 있고, 서민금융에서는 소득이 기준보다 많다고 제약합니다. 같은기준을 적용해서 하는거 아닌가요?
구달서	화물차 안정적인 안전운임제 재입법 다시 추진해줄 수 없나요?
호야수수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업자일까요 노동자일까요?

외국인 노동자

김영호	왜 불법체류자들때문에 대한민국 일용직 국민이 일자리를 못 구해야 하나요?
배우정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특히 일의 강도가 힘든 먹거리 분야에 도움이 되어주고 계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변할 수 없는걸까요?
송세현	인구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개방은 어느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나?
MURAT KAZAKH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질문합니다.
김영호	왜 불법체류자의 대한민국 일용직 시장의 악영향을 방치하고 있나요?
박창용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잠식으로 내국인 건설 노동자들이 설자리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문정	외국인 노동자 대신 무국적 고려인에게 일자리를 주는게 어떨까요?

지역 노동

장희원	부산엔 왜 일자리가 안 생기나요?
김신웅	노무현은 지역통합을 외쳤고, 저는 일자리 양극화 해결을 제시합니다.
박도연	일자리는 왜 서울에만 몰려있을까요?

가족과 라이프스타일
인구 정책

윤희정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김주환	다자녀가족의 혜택을 늘려줄수 없나요?
이요한	국가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출생률을 위해 정부가 간접이 아닌 직접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출생률을 높일수 있는 방법은?
이소영	아이를 갖고 싶지만 왜 갖지 못할까요?
김관용	몇살까지 일해야 걱정안하고 노후를 살까요?
김미혜	어떻게 하면 노후생활을 젊은 세대와 갈등없이 가치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유세복	우리나라 출산율은 절반이고 자살율은 두배인데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해도 될까요?
노일구	대한민국 청년은 언제까지 외로워야 할까요?
변휘원	출산율 저하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권희영	시니어 알찬 미래, 50~60대 시니어들은 직업도 꿈도 없이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정국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위기에 대응할 대책이 있나요?
장성복	대부분의 40대는 왜 가난한가요?
지민환	왜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이 없나요?
복인수	왜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가?
조선이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삶의 목표(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것에서 벗어날까요?
최소정	출산을 하는데 있어 정말 돈만 필요 한 것인지?
김양민	저출산으로 젊은이가 사라지면?
김은한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장년에겐 안정된 주거와 일꺼리, 노년에겐 보장된 안락한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손신영	저출산 인구감소만 걱정? "이미 있는" 인구는 왜 소홀히 할까요?
변지우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어도 저는 지금처럼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윤대섭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효성	한국의 인구 증가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20년뒤 대한민국 안전한가 ?
이강희	다자녀 혜택이 정말 있는 건가?
김황배	인구감소대책의 시작과 끝은 주택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서경희	왜 출산양육정책이 신생아와 영유아에 집중되지요?
신성희	무엇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나요?
최승연	당신은 노후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황소연	여러 다양한 어려움(실패?)을 겪고 있으며 혼자라 생각하는 10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송세근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정말 풀 수 었는 문제인가?
김동현	저출생률로 인한 인구감소 어떻게 해결해야 할것인가?
최영주	저출산 대책은 주거문제와 남성의 육아를 당연하게 하는 사회시스템 아닐까요?
박소영	왜 대한민국의 청장년층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늦을까?
양종석	저출산 시대... 자녀출산을 장려하면서 왜 육아는 부모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가? 부모들이 일하는 동안 나라에서 데이케어 할 수는 없는가?
김신웅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7가지 예 제시)
조도민	인구감소(출산률 저하)가 꼭 미래의 소멸을 가져올까요?
유현우	청소년, 이제는 중심에 서야 합니다.
심지숙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김남숙	출산과 국민연금을 합친다면 출산율은 올라수있을까?
김수진	워킹맘은 왜 아이가 아플 때, 맘편히 맡겨놓을 곳이 없어 동동거릴까?
김연수	어렵지만 사회적 합의로 우리나라 500대 또는 1000대 기업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외주 없이 본사 직영은 불가능 할까요.
이윤정	자영업자 부부도 애를 낳을 수 있을까?
박재식	저출산 전에 결혼 안 하는 또는 못하는 노총각 노처녀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정재녕	프리랜서 엄마는 출산하면 수입이 0 인데, 아이를 어떻게 낳나요?
곽나영	출산율0.7시대에 정자은행은 왜 들여오지 않는가?
황인혁	저출산 문제는 이미 자녀가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결 해야하지 않을까?
김영호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독재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를 뽑지 못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김영호	대한민국이 불안정한 분단상황이 지속되는 한 저출산의 근본해결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김다연	현재를 사는 것도 버거운데 노후에 대한 걱정이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이아름	일하는 엄마인 나는 왜 둘째를 꿈 꿀 수 없는가
김형근	인구감소가 축복이 될 수는 없는가?

유승현	평생을 직장인으로 매일매일을 똑같은 일상으로 열심히 40년 가까운 삶을 살아도 왜 노후는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정한것이 현실인가?
우제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김경성	왜 아이를 낳아야 하나요?
황인규	대한민국 인구 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용기	다자녀 부모에게 애국자라는 말만 하지 말고 국가유공자 자격을 줄 수 없는가?
허경태	출산율 저하는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인가요?
강종구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에서는 인간은 갈수록 부자가 될까요?
김상용	출산정책 필요해요.
이상영	늙어서 노후를 비참하게 보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은석	죽지 않는 사회, 사람 살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자에 인색한 이유는 왜일까?
홍영기	우리나라 출산율이 심각하다 하는데 왜 다자녀(3명 이상) 가정에 대한 특혜는 없나요?
이정주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손정훈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인구감소(출산율저하 등)의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도입 필요성
박은진	저출산 시대 출산을 감당하는 엄마를 위한 수당은 왜 없나요?
김진우	왜 출산 장려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나요?
김희주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없는 건가요?
김정미	인구절벽이라지만 우리나라에 아무나 오는건 싫어요
공진세	저출산,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해 봅니다.
황대용	모든 사람이 왜 좋은 부모가 될 거라 생각하는가?
옥순창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성현	윤석열이 탄핵되면 우리(2030)의 삶은 달라질까요?
신영희	인구증가정책 - 출산, 육아, 보육, 다자녀등 출산관련 정책을 정부에서 통합 관리가 절실(혈세낭비,차별방지)
강석진	대한민국은 다자녀를 위한 정책은 가지고 있는건가요???
김동직	아이는 왜 낳아야 하나요?
김원규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경호	중장년에게 혜택을! 왜 중년들에 정책은 바로 와 닿을수 있는 정책은 없을까?
김명규	저출산의 관하여 제안드립니다.
윤석범	저출산대책 신생아특례대출은 받을수있는 대출인것인가..
안문수	왜 국가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에 대한 정책에는 무관심 할까요?
박상덕	어쩌다가 부자 젊은이나 가난한 젊은이들이 거의 다 애 낳는 것을 무서워하는 저 출산의 나라 한국이 되었나요?
최봉식	출산률 올리려면, 결혼 빨리해서 자녀를 둘 이상 낳을 경우 군 면제해주면 어떨까요? 그 국방비 조금 빼서 양육지원금 해주면 호응하는 청년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김상희	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 정책은 인구 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박성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신혼부부 지원 부족 아닌가요?
이주영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일	저출산 정책은 왜 신생아 유아정책 위주인가요?
김주연	왜 낮은 출생률을 걱정해야 하나요?
조민주	왜 한국남성 및 그들이 다수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이 사회가 심각한 여성혐오로 인해 출생률이 낮은 걸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재만	출산율과 경기 좋게 하는법 없을까요?
최병업	한국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은?
배혜정	난임 지원, 44세 이상은 왜 안되나요? 난임 지원에 나이가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이재경	인구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김진태	대한민국 노인 들 삶 이대로 좋은가
이승철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소득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일부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예림	성인은 왜 20살입니까?
김지수	아이들이 우정을 쌓아갈 수 있도록 바꿀 것과 지켜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
최재훈	한국의 아동은 공부로 인해 가장 불행한 삶은 사는데 그 불행을 부모가 직접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는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스런 모습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회령	아름다운 노년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류진성	챗GPT가 글 쓰고, 로봇이 일하는데... 저출산은 오히려 기회 아닐까요?
고정진	대한민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원인은 다른 나라와 이유가 다르다.
오기수	자녀돌봄 휴가는 있는데 왜 부모돌봄/부모공경휴가는 없는 걸까요
유정민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종호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소멸위기에서어떻게 이겨내야할까요? 국방위기까지 오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민자 수용을 통한 인구를 늘려야 할까요?
김영범	피부에 와닿는 출산율 높이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김화영	신혼부부는 같이 살게 해줍시다.
황춘식	정년퇴직 후에 어떻게 생업을 이어가야 하나요?
전한수	저출산 해결방법으로 자녀1 인 소득공제 500만원, 자녀2인 500+1000만원, 자녀3인 500+1000+1500만원 소득공제를 해주면 어떨까요?
전소영	2~30대 젊은 연령대에게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할 수 없나요?
박충호	고령화사회에서 서민의 상실해가는 노동력과 빈곤화에 대한 신속한 대안은?
styledіy8837	되도록이면 이주정책을 넓게펴서 인재를 받아들이는게 좋지 않을까..
이규룡	결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웨딩업에 공공부문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요원	5년 살아보기 계약결혼, 10년 계약결혼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용태	아이를 낳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가야하지 않을까요?
민용태	지금부터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는 고교졸업때인 만 18세때까지 매월 100만원씩 출생아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출산장려정책을 해야하지 않나요?
민용태	매월 둘째 아이 출산시 150만원씩, 셋째 아이 출산시는 20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 인구절벽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과 돌봄

오상윤	건강수명은 지난 그러나 수명이 남아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의 삶은 나아질 수 있나요?
장미	싱글세 도입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윤희정	왜 이 나라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야하나요?
권세현	1인가구입니다. 식당에서 혼밥은 눈치를 봐야 하나요?
김덕용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제안합니다.
성용상	정년 퇴직 후의 삶은 왜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조태중	30대 중반 청년들이 스펙 걱정으로 결혼을 주저해 출산율이 저하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배연우	결혼 육아로 잃어버린 10년 경력. 나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하나요?
최준호	40대 싱글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문석호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방향이 궁금합니다.
임상현	오직 혈연 관계만이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마땅한가?
이용수	국가, 사회구성의 가장 기본, 기초라 할 수 있는 우리 '가정, 가족'이 해체, 파탄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용현	결혼제도는 당연한 것인가?
최유리	육아정책 균형과 공정성에 따른 불균형 문제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한혜경	대한민국에서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올까요?
류부열	고령화 사회 수많은 은퇴자들의 삶에 대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없는가?
황원규	아기를 키우고 싶어요
김다솜	동거인이 왜 보호자가 될 수 없나요
김춘수	왜 결혼하지 않거나 자녀를 낳지 않을까요?
이근모	나는 엄마를 존경합니다. 아이도 저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김사원	일정 자산 이상, 임대 사업자 등 띄히 돈을 쓸 데 없는 사람들에게 싱글세 도입 추진을 원합니다.
김사원	한부모, 재혼, 다문화, 비혼동거 , 공동체, 동성, 1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존재하며 이들을 위한 여러 복지 서비스 시스템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익경	나도 노인이 되면 박스를 주워 살아야 하나?
이주경	동성결혼은 왜 인정받을 수 없나요?
김영호	왜 1인가구가 일상인 지금 채용란에 비상연락망을 적으라고 하나요? 완전히 혼자인 1인가구도 많은데요?
박상연	신혼부부 지원정책에서 고소득 신혼부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최문선	40대 젠더입니다. 의도적 비혼주의자도 아닙니다. 1인가구를 위한 현실적 지원정책은 없나요?
김영호	대한민국에 여러 이유로 결혼을 못한 사람들을 위한 국가주도의 만남 정책을 만들면 어떨까요?
송미선	방학 때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석	왜 ! 대한민국에서 육아를 힘들어 할까 ?
류재원	육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준석	맞벌이 부부가 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김진경	40대 비혼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채현숙	육아 끝 중장년의 경단녀들, 괜찮은 일 할수 없을까요?
양희진	우리나라 엄마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재홍	아이 키우는 것이 죄인가요?
황태정	아이 키우기 어렵네요.
윤인숙	개인의 성적 취향은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할까요?
유선영	(대행업체X)사랑하는 사람이 저개발국가(아프리카) 사람이라도 행정제도(비자) 장벽때문에 헤어지지 않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최순례	국제결혼 이혼시 5년 결혼제한 규정을 다시 검토 해주세요
김동곤	자녀 양육 및 저출생 관련 예산은 잘 쓰여지고 있는가?
양시내	왜 우리나라에서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들까요?
구민주	육아정책은 어디로?
여경희	1인 가구(비혼)에 대한 지원은 있는가?
mandoo-doc	사랑하는 친구랑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zzcity-rv7gr	선진국이라는데 나라에서 인정하는 가족 형태는 한계가 많은 거 같아요
wildforager	결혼제도 필요한가?
김상진	20대에 일찍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기를수 있게 현금지원을 해주는건 어떨까요?
최현	50대 중반의 아빠와 스무살의 딸과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변지우	맞벌이인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과연 옳은 걸까요?
이세미	아빠들 육아휴직하기 왜이리 어렵나요?
최가라뫼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현진	왜 부모를 자식이 부양 해야 하나요?
이현정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게 과연 이 시대에 잘하는 건가요?
김동곤	아이들은 꼭 부모가 키워야 하나요
홍찬선	가족을 지킬 수 있나요?
유현석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김윤택	미래를 위한 준비.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준비해야 하는지?
정인규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
김영수	사람들은 왜 미칠듯이 사랑하고 죽일듯이 헤어지는가!
신이호	미성년 자녀(3명, 만9세 이상)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요~
이나겸	부모가 아기를 돌보면서 행복하게 일정 시간만 일할 수는 없을까요?
김건기	가정교육의 복원과 어른의 복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재호	죽음과 애도에 웬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장례 비용 상식화에 대해)
진용호	결혼을 하기보다 이혼을 하거나 따로 살아야 경제적 이익이 큰 사회인것 같습니다
권정하	출산율 걱정? 그 본질인 태어난 아이들이나 잘키우게 해주세요
양희진	토론 카테고리에 육아는 왜 없습니까? 간절히 요청합니다!!
정재식	왜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들, 아이들 낳지도 않은 부모들에게 투자하나요? 이미 아이를 낳아 출생률에 이바지한 부모, 아이에게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영범	아이는 부모만 키우는거 같습니다.
박재우	세대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및 공공서비스 방안에 현재 무엇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정우	가족이민 전략, 농어촌 지역 활성화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jperf7	결혼제도 안에서만 허용되던 것을 바꿀 필요가?

삶의 질	
하준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어른들의 답은?
제성대	40분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남식	인간의 궁극의 목표...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행복을 향한 진지한 고민을 왜 정치권에서는 진지한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요?
이민철	인생은 즐거울 수 있을까?
우정미	삶에 행복 지수가 없어도 나와 우리와 나라가 행복하려면 무엇을 해야할까?
김주원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의 잣대를 생각하며 살까요?
정원희	내가 행복하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장대흥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삶의 질이 올라갈수 있는 길이 과연 있는걸까?
문철응	8가족의 기초 생활 수급자입니다 이대로는 너무나 생활이 어렵습니다
김주연	얼만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요?
김우진	태어난 김에 사는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송미령	왜 이렇게 사는게 힘든가요?
홍가람	우리는 왜 살아야 하나요...?
박태규	올해로 50... 아내와 자녀둘... 연봉1억 이상이지만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힘들어야 할까요?
윤연정	우리들 삶은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남희정	아이들이 나다움을 발견하고 자기답게 세상과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유현석	우리는, 지금 왜 외로운가?
유현석	죽을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유현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유현석	우리는 왜 결혼을 하는가?
이미영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thkim75	전 인류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안정희-p3m3p	국민이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
이주용	모두가 행복할 순 없을까요? 아니 최소한 불행하지 않을 순 없을까요?
유현석	지금 우리는 나는 어디에 서있는가?
유현석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허인숙	우리는 언제부터 개인의 권리를 이렇게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김소희	평생 성실히 일한 자들에 대한 기본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창재	행복 에 대한 정의를 사전에서 바로 잡을 수 없는가?
유현석	우리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있는가?
유호상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까?
서원호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사람답게 사는 게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유현석	기본소득을 스스로 만들어보는 실험을 하는건 어떨까요?
유현석	행복,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홍영란	왜 계속 힘들까요?
정낙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김근영	행복한 삶은 가능할까요
박창영	한국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냐하하2334	평균의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건가?
조재일	대한민국에서는 왜 죽도록 노력해야 평범하게 살 수 있나요?
한지혜	꿈이 뭐에요? 라는 질문에 미래에 되고지 하는 직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생명 결정권	
김종우	태어남은 나의 선택이 아닌데 죽음도 선택할 수 없는건가요?
이미경	독신으로 평생 살다가 인간답게 죽고 싶습니다.
김도연	가정에서 의료서비스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방법은 없나요?
김도연	안락사를 허용 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박해진	자신의 생을 스위스와 같이 스스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박하영	웰 다잉 문제를 왜 국가가 유연하게 생각 하지 못할까?
OH JAE SUNG	인간은 스스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를 선택할 수 없는것인가?
이승희	내 삶을 나의 의지대로 고귀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조봉남	왜 안락사가 합법화되지 않는겁니까?
손성문	<인간의 존엄사 안락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료불가한 견딜수없는 통증으로부터 벗어나 죽음을 맞이하게 돕는 것도 생명존중이 아닐까요?
이영선	왜 우리는 존엄사, 안락사 제도가 도입되지 않나요?
박주환	고통 없이 죽을 순 없을까? 편안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은 언제 올까?
최지현	우리 사회도 이제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김점숙	안락사는 불가능 한 것인가요?
장정희	나는 집에서 죽고 싶어요.
조용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원	내맘대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죽을 때는 선택권이 있었으면 합니다
황경미	내 삶의 마지막..죽음을 스스로 결정 할수는 없는건가요?
문은주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하는이유는 뭘까요?
전동철	조력사 도입이 필요할까요?
유종민	죽음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유진	나의 마지막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가?
윤범수	죽움은 왜 고통스러울까요?
이성임	노령화 시대!! 존엄한 죽음? 내가 생을 마감하고 싶을 때 합법적으로 죽는 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정미	안락사가 허용되어 죽음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언제 올까요?
정소영	고령으로 늙고 병들었을 때 편안하고 안락하게 죽을 권리는 왜 없을까요? 요양원은 죽으러 가는 곳이고 실제로 그렇던데 왜 해결이 안될까요?

주선영	내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수 없을까요? 존엄사 공론화 해주세요..
이정연	한국에 웰다잉이 있는지?
장규홍	존엄하게 죽고 싶습니다. 존엄사 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김민정	우리나라 납골당은 왜 다 천편일률적인걸까요?

젠더	
한진희	왜 남자 화장실을 여자가 청소하나요?
최사랑	동성혼 법제화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김도연	면접볼때 2030여자들에게 아이 생각은 있냐는 질문 안하면안되나요?
김진호	기독교계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 간 결혼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데,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한휘린	대한민국 젠더은 언제까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죽임당해야 하는가?
홍진숙	우리는 언제나 전철이나 길거리같은 대중장소에서 무작위 젠더들에게 시비를 걸어 혐오스런 욕을 하는 사람을 안볼 수 있나요?
김종화	동성혼은 왜 금지되는가?
최순례	대한민국은 여성만 있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여성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여성이라는 단어 빼던지 여성 가족부 없애주세요
이현아	기독교가 진보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인 “차별금지법”은 꼭 고수해야 하나요?
오세훈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 왜그럴까
이희수	예쁜 여자에게 예쁘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비정상입니다.
서효란	젠더가족부에 대한 편견과 갈등, 이대로 괜찮은가?
권경훈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를 해결할 수 있을까?
김윤규	젠더가족부 고집할 필요가 있나?
국윤나	젠더을 향한 성차별, 언제쯤 근절될까요?
문이현	성소수자 결혼 언제 합법화되나요?
이아영	차별금지법 대상은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이지, 동성애를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재우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 젠더운동가들이 나아갈 방향은?
안병국	국제결혼 8년차로서 부부간 언어 소통이 너무 어려운데 관련 법령 등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혜숙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고려인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제도적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동물권	
김금란	반려동물 건강보험제도를 왜 국가에서 만들지 않나요?
김선미	대도시 및 외곽 강아지키우기 법령 만들어 주세요
방기인	반려견의 노상방뇨 이대로 괜찮은가?
안미영	안타깝게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강수진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을 만들 수 없을까요?
안지향	학대, 품종개량, 파양, 유기,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권 문제...나라에서 동물복지를 위한 근간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thkim75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존중받을 수 있을까?
오윤경	동물보호단체의견만 듣고 애견 Breeder들의 권리는 침해되도 되나요?
황지연	동물학대법 처벌강화, 죽이는 시보호소가 아닌 살리는 시보호소 유기견,유기묘 공고기간을 꼭 거쳐야만 입양,임시보호를 할수있는 어이없는
	법안이 살릴수 있는 아이들까지 죽이고 있는것을 알고는 계시는지요? 보호소법도 들여다 보시고 현실정에 맞는 법안으로 바꿔주실수 없나요?
배경환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문화 및 미디어 공공인식과 언론	
홍영표	<추적 60분> 같은 프로그램 내용을 취합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매주 사회 문제를 알리고 해결해 주실 순 없나요?
박연옥	Kbs 시청료를 안내고 싶어요. 법안을 만련해 주실수 없나요?
이상걸	언론개혁, 최소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지 못하도록 언론법을 개정해야 한다.
박주현	기자들은 왜 좋은 질문을 못할까?
김철	언론 개혁은 언제 이루어 질가요?
이종경	여론조사는 왜 항상 복잡하게 여러가지 항목들을 물어보는 걸까요?
이철호	언론(유투브포함)의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정은영	왜 우리는 공정하지 못한 언론을 제어하지 못하나요?
박형민	왜 우리는 지하철에서 눈은 휴대폰을 향하고 귀는 이어폰으로 막고 있을까?
박원철	우리나라 레가시 언론들의 기득권 편들기 보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요 ?
김종열	눈뜨면 스마트폰,TV ,언론 매체등을 맨 처음 접해야 되나요
공진세	언론이 정상화 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밖에 답이없다.
김샛별	언론사에 지원금 주는 방식을 바꿔주세요
임영규	올바른 언론은 어떤 언론일까요 ? 올바른 언론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변재민	불의한 언론 권력이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는데도 왜 그냥 방치하는 걸까요?
이웅희	여론조사기관을 등록제에서 자격을 갖춘 기관만을 허가하는 허가제로 바꿀 법률을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황준환	수구언론의 문제에 어떤 개선방향을 가져갈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노청호	말도 않되는 여론조사 왜 생기나?
하성민	미디어 시장을 MB 미디어법 날치기 이전으로 회귀가 가능할까요?
정유경	진보종편은 왜 만들수 없나요?
임연화	방송사에 정부가 지원하는것 중지하고 시민에게 바우처 주어서 선택하게하자!!
박상덕	수사청장 기소청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선관위원장 방통위장 방심위장 그리고 KBS MBC YTN 같은 국가지분 있는 각 언론사들의 각각에 사장들을
	2년 임기에 4선 까지만 하게 해서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지 않으면서! 무슨 국민 주권과 권력분립을 얘기 하나요?
안세원	언제까지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언론,방송사를 마냥 방치해야 할까요?
방기인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되고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가?
심석진	지독히 지랄 맞은 언론 관행 받아쓰기 볼북에도 기준없이 정해진 언론사들한테 주는 용돈의 바보행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박성진	국민의 정확한 알권리인 언론을 아무도 건들수 없는 독립기관으로 못하는가?
이주현	공직자의 거짓과 선동으로 물든 소셜과 언론. 바꿀 방법은

이승규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인 막말,거짓뉴스와 언론의 확대보도 행태는 언제 고쳐질까요?
유귀한	어떻게 해야 참언론을 만들수있을까?
이종경	여론조사 안심번호로만 할 수 있게 할 순 없을까요?
송인광	[언론개혁] 국민의 알 권리, 즉 우리 모두의 알 권리는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윤지석	조선일보같은 반민족 족벌언론을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승준	왜 진보 TV 채널은 없는가?
장순영	언론사 국가지원 예산 전액 삭감 가능한가요?
홍창효	어째서 여론조사는 조작되는가?
김병훈	조중동을 비롯한 잘못된 언론을 바로 잡을 수는 없는것인가?
김영호	왜 허위사실유포 언론사를 해체하는 법을 안 만드나요?
최진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나요?
김재환	불공정, 불균형의 언론상황을 어떻게 정상화 가능할까요?
문찬영	잘못된 언론인들은 왜 계속 존재할까요? 그들에게는 상식이나 양심의 가책이 정말 없는 건가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왜 계속 존재
	하는것일까요?
이재경	언론개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이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지혜	TV수신료 이제는 폐지해야 할 때입니다. (자영업자 이중부과)
성인경	언론개혁, 과연 언론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 민주주의 원칙의 국민권력 조차도 견재 불가능한 권력인가? 우리는 바보인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가? 이제 국민이 언론을 개혁하자.
최가라뫼	언론 기사 아카이브를 공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이유	국민이 알아 듣지도 못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국민이 돈을 왜 내야 합니까? (티비 수신료 폐지)
이주애	왜 억지를 쓰고 거짓선동하고 우기는 사람들 말을 언론을 받아서 써주는걸까요? 깨끗한 언론은 만들기 어려운 일 일까요?
송세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언론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합니다.
신영진	정치는 왜 언론을 권력으로 만들었을까?
김동훈	언제까지 인터넷 포털 문제와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극우 언론사들을 방치하실 겁니까?
김서유	언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 하면 안됩니까?
김란희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지 못하도록 언론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진영	건강한 미디어만 송출되는 방법은 없을까?
곽대종	정부가 신문광고비로 매년 1조원씩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나요?
곽대종	왜 중앙부처에 기자실이 존재해야 하나요?
김윤정	자극적이고 사실확인안된 뉴스선동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곽대종	왜 왜곡/선동하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나요?
육현경	언론개혁은 요원할까요?
박상재	언론은 왜 신뢰를 잃어가는 걸까요?
윤조왕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할수 있는 시스템은 없을까요?
박용규	신문, 공중파 방송 등에 대한 편향 논란이 많은데요,, 문제가 될때마다,, 스스로는 편향되어있지않다는, 말꼬리잡으며 의미도 없는 변명과 공방,
	책임도 못지는 말싸움을 하는것보다는, 아예, 우리 미디어는 ㅇㅇ편에 서겠다.라는 공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떳떳할수있게 제도화하는것이, 뉴스
	소비자인 시민들의 참여와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될것 같다는 저의 생각에, 정말 문제가 큰 것일까요?
강대삼	올바른 언론 개혁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 인가요?
신지웅	TV 언론을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박용식	또 다시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장담 할 수가 있을까?
정태윤	좀 더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를 가능케 할 기술적/사회적 장치는 없을까요?
장은수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 바르게 만들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HellPer	왜 언론의 오보에 극심한 처벌이 없는것이가!!!
ryuhwanswan	언론이 왜 자꾸 저들(극우/보수)에게 마이크를 주는건지, 왜 언론은 계속 양비론을 고집하는건지...
와현아현수	TV방송은 사람 아프게하는 물건을 팔고 환자를 만드는데 방지할 방법이 있을까?
emmajang1516	뉴스의 마이크를 어떤 사람에게 줄 지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주협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제안: 진정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하려면 여론조사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휴대폰으로 접근하게
	만들면 됩니다.
김백민	언론 소비자를 위한 언론의 자유여야 하지 않나요? 누구를 위한 언론의 자유인가요? 언론인 언론사를 위한 자유인가요? 퍼나르기 기사를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안되나요?
안태환	왜 한국 언론에서는 멕시코의사법개혁을보도하지않나요?
최유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서 왜? 과표집되었다고 아전인수식 해석만 하면서 만무심하고만 있는가?
노진수	조중동 폐간 언제하나요?
김기영	진실을 외곡하는 언론들을 없애 버릴 수 없나요?
조윤정	우리나라 언론은 왜 항상 사실과 논리, 상식으로 풀어내기 힘든 국힘당쪽 편만 들까요. 영원히 안 바뀌나요.
이관우	한국 언론, 기사의 수정 및 삭제가 지금처럼 자유로워도 괜찮은 건가?
양기표	파오차이의 진실, 우리는 언제까지 언론에 속아야 할까요?
황인용	체제에 대한 여론조사는 왜 없을까요? 매우 중요하지 않나요?
박에스더	언론이 왜 친중이 되었을까요???
한창석	언론이 국민 눈치를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최봉식	언론 기사에 댓글을 남기는 사람은 왜 늘 정해진 사람들이고 댓글의 대량생산에 제약이 없어서인지 여론이 왜곡된다고 느껴질까요?
신재철	언론 개혁 진정 할 수 있을까요?
박상덕	국가 지분 있는 언론사들의 각각의 언론사 사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아야 만이! 비로서! 앞의 각각의 언론사 모든 직원들 한명 한명이 모든
이동회	국민들을 위해서 진실을 보도 하려 하지 않을 까요?
	레거시미디어의 정부지원금을 취소하고 탐사취재 전문채널 후원금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김현정	언론 삼진 아웃과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최형진	언론 제목장사 그대로 놔둘겁니까?
정창규	거짓정보를 퍼트려 사회 혼란을 가중하는 언론은 징벌적 배상으로 인해 폐간해야되고 징벌적 독일과 같이 징벌적 배상권은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
신수진	KBS TV 수신료 폐지할 수 없나요?
박용식	언론개혁이 되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강대성	불교방송이 있는데 왜 국민의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중계하나요?
민하기	전남 화순 능주 지역에 유선 비용이 없어 안테나 방송을 보는대 왜 KBS방송만 나오게 하나요 타 방송도 볼수 있도록 해주세요
임미령	언론의 자유? 악의적인 유튜버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있음 좋겠습니다.
민하기	시청권 보장에 관련하여, 지역에서 모든 지상파 방송을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최윤석	언론사의 정치 중립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김진태	KBS 방송국 이번 계엄? 조사가 필요 하지 않나요?
신영관	언론의 오보를 정정보도하는 기준을 보도한 오보량에 비례하여 보도하게하면 어떨까요?
김서현	막대한 세금을 받는 연합 뉴스의 공정성이 의심 될때가 많다. 국회나 시민단체등 규제가 있으면 좋겠다.
정경진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언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때는 최소 2~3년의 유예기간을 두길바랍니다
장성순	그릇된 언론과 유튜브 동영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원희	정론의 바른언론으로 가기위해 무엇부터?
김란희	언론사의 언론 조작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강대삼	언론 개혁은 꼭, 반드시, 당장 해야 합니다
구태원	KBS 방송국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역할과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형석	언론은 왜 누군가에게만 유독 더 혹독한가요?
박찬식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방안은?
이태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내가 원하는 언론사에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국민 스스로 언론의 감시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희주	미디어주권 상실의 시대에 대처하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찬식	우리나라 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안상은	언론의 행태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석동혁	공정하고 올바른 언론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이화향	언론 감시하는 장치를 광범위하게 세밀하게 만듭시다.
김주성	언론의 자유와 의무에 대한 별도 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김종수	공용방송MBC,KBS 절대 정부에서 손대지 못하게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현정	대한민국이 민주적이고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인 언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지나	언론 진실성이 보장된면 어떤사회가 될까요?

전통과 정체성

김남국	역사관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홍창효	삼국사기의 표지에는 분명히 삼국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삼국사기라고 배울까요?
황부석	유물이 발견되면 제대로 발굴하고 연구할수 있는 국가 이스템을 만들수 없을까요?
황부석	중도유적을 복원하고 연구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상범	왜 대한민국 지폐에는 조선시대 위인들만 있나요?
홍창효	역사 왜곡 서적은 왜 버젓이 팔리고 있을까?
이채훈	왜 ? 우리나라 화폐 인물들 은 모두 조선시대 사람 일까요?
오세희	우리나라 애국가는 바꾸지 않는가요?
정명래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 문제입니다.
이재문	알러지를 알레르기로 표기하고 발음하는 것을 표준으로 정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김석우	왜 한국의 국민 술인 소주는 주정이라는 화학약품에 물을 타서 마실까?
박혜윤	한 번 고정된 언어, 사상은 어째서 변하기가 힘들거나 불가능할까요?
고은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선생님의 처지를 알까요?
이성재	왜 국악은 발전 없이 지루한 문화재에 갇혀 자리 나눠먹기와 병폐에 빠지나요?
정주환	안중근 의사를 십만 원 지폐의 도안 인물로 합시다.
홍창효	우리 화폐에는 왜 독립운동가가 한 명도 없을까?
배서영	동학농민혁명가와 희생된 백성 30여만 명을 대한민국 지폐 7만 원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박남진	우리 선조들의 문화유산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인가? 그러한 문화유산이 존재하는가?
홍창효	단군은 신화일까, 역사일까?
이지수	한국어는 짧은 시간 내에 왜 이리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오홍영	우리나라 역사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을까요?
박정식	지금이라도 친일 청산을 할 수 있을까요?
오홍영	왜 우리화폐 중 지폐에는 다 조선시대 사람밖에 없을까요?
최재인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씨가 일본인에 의해 왜곡된 채 살고 있습니다?
송세나	역사왜곡 발언 시 징역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윤연정	내년부터 모든 유형의 달력에 발렌타인데이 글자를 인쇄하지 않을 거죠?
민경대	우리의 자랑스런 한글을 지켜주세요 (영어 사용을 최소화하는 규정 정비 요청)
하수환	우리말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한자,영어 등의 문자 사대에서 벗어나고,많은 법전이나 의학서적 등이 쓸데없이 남용되는 한자나 영어보다
	우리말로 적어져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박용성	우리 말과 글(언어 문자), 미래도 건강도 온전하지 않아 ~,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경진	용산 미군기지내에 일제 주둔군 부대건물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걸 일제 식민 역사박물관으로 개조하여 잊혀져가는 일제침략과 저항, 투쟁의
	역사를 보존하길 바랍니다
최희진	공식적인 자리에서 종교적 이유로 하나님이라고 하는게 신경쓰이는건 제가 이상한가요?
손혜경	일제청산은 어디까지일까요?
심혁규	하남의 매장문화재가 연구도 안되고 개발이 된다는데 이래도 되는가요???
방건	한글과 우리말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박준태	한글. 도대체 왜 계속 씁니까?
염미혜	'올바르게 말하는 법' 에 대한 돌아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회근	일본식 말법으로 어렵게 쓰인 헌법을 우리말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윤연정	'표준어'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용성	우리 말과 글(언어 문자) - 프랑스 <투봉법> 이상의 정책과 관심 필요!
윤연정	국사편찬위원회는 무엇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배혜정	화폐 도안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인물로 반영해 주십시오
오연주	우리 고전을 발굴하고 번역하는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양성에 나이라는 유리천장을 깨야합니다.
방가영	우리 문화 음식에 대한 영문 표기를 꼭 외국인이 설명+발음하기 쉽게 풀어 쓸 필요가 있을까요?
허영란	친한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한국역사문화여행패키지
김영호	5.16 군사내란반란을 왜 군사혁명이라고 아직도 잘못 표기를 하나요?

한류와 콘텐츠 경쟁력

김도연	여행지 숙박비 이대로 괜찮은거 맞나요?
이명식	한식세계화를 위한 노력,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이건석	GD 팬입니다. 암표 때문인지 콘서트 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GD 콘서트 영원히 못 봐야 되나요?
윤은정	해외여행 과몰입 시대.. 3면이 바다인 국내여행 살릴수 없나요?
노영호	한국판 해리포터 를 만들어 주세요
박창준	k-pop이 글로벌한 시대에 전통문화와 전통음악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수 있을까?
김사원	부동산, 명품, 투자에 열풍이 불고 있는데,이를 사회적, 문화적 자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정운	한국의 대중문화스포츠(팝,드라마,푸드,스포츠)에서는 많은 인재들이 글로벌하게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의 예술작가은 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요?
이상현	잠실 종합운동장 비롯한 88올림픽과 그에따른 전국 각지에 있는 스포츠 복합시설의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김승현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및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같은 공공 단체들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김병철	전쟁 게임 등 생존 게임이 젊은 청년들의 인지 기능 저하와 극우화를 유도한다는 주장,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혜선	유럽에 있는 한국식당에 식별 아이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왜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수괴 전두환을 영화에서 전두광이라고 잘못 적시하나요?
윤정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없어질까 봐 걱정돼요. 외국인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종하	암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새롬	우리 나라 사람들은 왜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 드라마와 영화를 소비해 버리기만 하고 사회 변화를 꾀하지는 않을까?
이기영	세계를 선도하는 한류문화의 철학, K-spirit은 무엇일까요?
도완영	k 문화 중 아까운 자원이 있는데 현대인의 문해력 문제때문에 내버려두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임효준	스포츠의 탈정치화는 가능할까요? (지자체와 자치구 등 정부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프로스포츠산업의 현실에서 깊은 고민에서 질문드립니다.)
강지행	영화제작을 위한 세트장을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김태주	왜 대부분의 문화 산업에는 권위적인 예술상이 있는데 게임은 권위적인 예술성을 평가하는 상이 없는가?
김태주	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다른 관광 강국에 비해 현저히 낮을까?
이지윤	K팝 산업의 꽃 K돌 콘서트를 겨냥한 해외발 조직적 암표상 이대로 괜찮을까?
윤성우	한강 작가님 사례처럼, 한국인이 세계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게 지원과 혜택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김우현	연예인의 천문학적인 출연료는 누가 부담하고 있나요?
유현석	대한 민국 축구대표팀은 세계최강, 우주최강이 될 준비는 하고 있는가?
이기식	전통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관한 정책적인 해법 제시되어야 함
유오식	덕지덕지 보기 싫은 간판들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정영옥	한국의 스파크 문화 정의 필요할 때? 왜?
이은규	드라마 한류가 머지않아 끝나는데 왜 대책이 없을까요?
김현근	상위1프로이외 영화인의 대다수는 소리없이 죽어갑니다.
이승호	대한민국 길보드를 다시 부활 시켜주세요
김연은	게임에서 여자캐릭터의 성적이고 성차별적인 묘사를 규제할 수 없나요? 너무 유해합니다.
전기수	독립된 리그인 KBO는 왜 당연한 주 5일 근무에 대해 질문 하지 않을까요?
김명재	예매취소 수수료가 암표를 더 조장하는건 아닐까요?
방가영	e-sports 종주국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허영란	관광도시 경주는 왜 일본의 교토를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김태석	K스포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 지원

박해준	젊은 세대가 이용하는 문화는 그 세대가 직접 규정하고 동의하는 과정과 절차의 틀에서 규제되어야 한다
박윤수	요즘 세대는 왜 '추앙'에 몰입하고 있을까요?
하수환	우리나라 예체능 문화는 왜 선진화가 되지 않는가?
이선영	미술작가들에게 정부지원은 왜 작품구매가 없나요?
박제환	건설 부실 및 비리 없는 건축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CHOI HOUN JIN	우리나라에는 왜 장인들이 점점 사라지나요?
이무용	불법웹툰유통 근절책이 필요합니다.
김남균	예술지원사업의 공모가 왜 서류전형으로 이루어지나요?
정원철	정치가 행정가들의 예술가치 인식에 대한 제고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신지웅	부산 서면 근처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놀거리가 기원 정도 밖에 없네요. 시차원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해보는 건 어떤가요?
윤광식	문화부총리를 만들어 주세요!
윤성원	왜 우리나라에는 디자인진흥법이 두 개가 있을까요? 통합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추유선	예술정책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김예선	예술을 하면 왜 배가 고플까요?
김종창	예술가는 사회적인 직업군인가요?
김미선	헤어디자이너와 같은 프리랜서, 예술 서비스 직군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김아영	예술가의 노동에 대한 가치는 자본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걸까요?
김정민	예술, 문화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수 없나요?
김원	무명 배우들은 언제까지 가난하고 부당한 현실을 참아야 하나요?
최재정	왜 만화분야는 산업화 될수록 창작자가 더 힘들어질까요?
김원	연예인들이 언제까지 죽어야 할까요?
오혜령	예술이 사회를 이롭게 합니까?

정경진	대규모 국립 자연사 박물관이 세워져 현재 우리의 터전이 어떻게 만들어져 어떤 시간이 흘러왔는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진	근대 미술관이 없습니다.
백철	도서관들이 작가들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박찬식	세계적으로 유명한 길거리 아트거리(그래피트 아티스트)를 만들면 어떨까요?
김민호	국가대표 축구에 있어서 아시안게임이 아닌 아시안컵에 병역 면제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김대중	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배드민턴장)은 아직도 특정 동호회가 독점하고 있을까요?
박용진	골프장이 너무 비싸요
정주나	우리의 도서관은 왜 조용할까요?
이수정	연예인 인권보호에 대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임연화	예술인 고용 보험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치관과 삶의 방식

차동원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튜브, OTT, SNS, 게임, 웹툰 등 온라인 세계에만 빠져 있는가? 독서는 왜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는가?
이문수	왜 속을까? 거짓인 줄 뻔히 알면서 이단 종교 왜 믿어줄까?
황주호	정신이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 독서하는 국민이 많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봉란	종교에서 시작된 이념 갈등이 너무 심각한데 왜 각 종교 단체는 화합의 노력과 메시지가 없는 걸까?
정재대	전국민 독서습관 만들기 운동을 실천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은	왜 독서량이 적을까요?
김봉학	극우화된 종교 집단은 본연의 종교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태훈	종교를 제도 내에서 관리할 수는 없을까요?
고서희	종교는 왜 세금을 안 내나요!?
문대현	동네마다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김건희	사이비 종교 단체를 없애려면?
김유진	채식주의자들도 편하게 여행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언제 올까요?
전성준	도서정가제 지금도 과연 필요한가요?
배수인	계층간 문화자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윤재복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합니다.
신동호	올드카에 대한 정의, 조건, 혜택 등에 관한 법이 왜 없나요?
유상원	출판 위기를 극복은 풀뿌리 출판생태계 회복으로부터 :: 독자 확장이 아니라 작가 생존이 먼저입니다 :: 출판생태계를 살리는 1천억 원 출판지원사업 제안

미디어 리터러시

김태형	동서양의 원전이 한국어로 번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원전의 번역이 학자들에게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시호	미디어 수업은 득과 실 무엇이 더 많을까요?
유재욱	악의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들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로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요~??
김천일	인터넷 광고들, 특히 선정적인 광고들은 왜 제한없이 보게 되는가?
이왕수	일간베스트 작성글에 대한 찬반 버튼의 문제점,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김영호	왜 당장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수괴 윤석룔 민간인 김건희 선동 유튜버들의 유튜브를 정지시키지 않나요?
조경호	주요언론 포털뉴스 좀 깊이가 있고 정도가 있는 내용을 찾아 방송하면 안될까요?
박상진	언제까지 포탈을 언론을 이용하는 창구로 사용하게 할 건가요?
남궁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할 경우, 공익 제보와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김도영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그 표현과 의견의 출처를 따져물어야 하고 혹 그 출처가 왜곡되었거나 거짓에 기반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지선	포털 뉴스 댓글 폐지, 언론개혁을 향한 첫번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최혜지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의 명암과 표현의 자유, 뉴미디어 관련으로 법안이나 이런 걸로 제재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유철	인터넷 포털의 기사들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어야 하나요?

건강과 의료
의료 정책

손진우	이제 우리나라도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고칠때가 왔습니다.
홍영표	실력 있는 간호사, 간호 조무사가 정식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는 없나요?
오봉규	진정으로 전국민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이경아	예전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박낙준	의료 민영화 수순인가?
김순표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한 이 나라에서 어떤 도움 받을수 있는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이재호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단계적인 주치의제도 도입 방안은?
김양민	중증외상센터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 조직하에 거점으로 각 도마다 하나씩 두고 소방, 군인처럼 사명감으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안되나요?
정민지	해외로 출국 할 때 국가별 약 가이드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진	백신의 효과에 대한 회의나 접종 부작용 얘기는 왜 늘 음모론으로만 치부될까?
김다혜	남녀노소 국민 모두가 다양한 운동 종목을 배울 수 있는 공공인프라 확충과 1가지씩 부담없이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승규	피부질환 진료를 하지 않는 피부과는 정말 피부과일까요?
송은기	의정갈등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박호신	중증외상, 청소년과, 산부인과에는 보조금을 높이고, 최근 인기있는 과에는 병원 보조금을 줄일 수는 없나요?
강서규	병원의 선택진료제도 이용한 과잉진료 왜 방치되고 있을까?
한명우	경찰병원과 군병원, 공공의료원 등을 상급병원으로 격상해서 공공의료 확대와 지방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면 어떨까요?
석가형	왜 비전문가인 환자가 진료과를 선택해서 방문해야 하는가?
전종열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 권력의 견제 수단은 무엇인가요?
김영호	왜 매년 실력 검증 시험을 통해 실력 없는 의사, 변호사의 면허를 취소·박탈하지 않나요?
김용구	돈이 먼저인가 생명이 먼저인가?
조경호	아이들이 저학년부터 고등까지 다양한 언어를 습득하고 한 가지 운동, 한 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해 주세요

지재용	병원 의료지원과 동일하게 중요한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들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오남기	왜?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중증외상센터 문제는 해결 되지 않고 반복되는가요?
허재혁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박미정	교육부는 감염병 업무를 언제쯤 의료인이 담당할 수 있을까요?
thkim75	100세까지 건강하게 전 인류가 안 아프게 할 방법은 없을까?
lollollol_lollollol	응급 환자나 중증 외상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제 시간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미	치료기관이 환자를 호구로 여길 수 없는 사회로 나아갈 방안은 무엇일까?
진재호	한의사의 진단권에 왜 제한이 있을까요?
양명석	의료는 세계 최고인데 응급차량 관련 운전자 간호사는 전무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임동규	장수촌 사람처럼 현대인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는 없는가?
이동욱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효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장 박주민 의원님. 용어 문제로 인해 제 한의사 면허가 박탈되었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진한	AI 시대에 의사가 필요합니까?
김희은	의료개혁에 의료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이지훈	부산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서울병원에서 공유할 수는 없나요?
김주연	피부과/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여 흉부외과/소아과에 지원할 순 없나요?
안은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정년퇴직자)가 납부하는 고액의 건강보험료 개선 방법은 없을까요
김선홍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입법을 제안합니다
최영수	특수건강검진 개인민감정보와 관련해 본인 이외에는 민감정보가 통보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윤성우	오로지 '침술'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침술사'를 많이 만들어야, 저렴하고도 제대로 된 최고 의료 기술인 '침술'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안상윤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고윤정	치과기공사는 보험 기공보철료를 나라에서 바로 받을수 없나?
김현주	의료 수가 구조와 필수 의료 문제해법이 필요합니다.
장현수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고민과 합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애영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침 뱉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캠페인 촉구(건강권 침해)
진연화	1인가정의 보호자 없이 모든 의료시설 이용가능할까요?
최윤석	의료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신정훈	한국 의료체계 개편에 대한 제안: 투트랙(2-Track)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윤연정	내가 사는 동네에서 편리하게 안전하게 진료받고 싶습니까?
김민정	대기업과 협업하여 AI기반의 치과 기공업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진숙	왜 꼭 현장 진료를 해야하나요?
김준자	건강보험공단의 통합간호간병 환류 인세티브 제도의 세부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완영	사망률 1위 암. 치료하는 고가의 치료기들 국민들이 걱정 안 하고 쓰게 할 수 없나요?
한수정	대한민국 국민 건강에 유해한 것들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김유경	지역의료와 연구의에 대한 생각과 질문입니다.
선은정	물리치료사는 언제까지 의사 밑에서만 일해야 하나요?
강성원	매일 운동하는 사람에게 지역화폐와 형식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일정금액을 주는것을 제안합니다.
이윤미	병원 정상화는 언제쯤 될까요
박성범	어떻게 하면 의료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수 있을까요?
정윤묵	의료인의 적극적인 진료저지(응급처치, 수술 등)를 위한 악법(판결)을 계속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현구	부족하고 진료받기도 힘든 소아과. 어린이집 순회 의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호준	지방에 의사가 없다고, 비인기 의사도 없다고 들었는데 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영균	미래 병원의 형태는 어떻게 변할까요?
지완진	가까운 거리에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육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험

김영민	의료기관내 간병제도를 국민의료보험으로 가능하게는 안될까요?
김원용	의료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할 수는 없는건가요?
박승헌	우리는 모두가 건강보험비를 내고 있는데 왜 또다시 실비보험을 가입 하여 이중지출을 해야하나요?
문준희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이게 맞나요
김대훈	민간영리 실손보험의 문제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주소윤	지역 건강보험 수급자가 취업의 길도 막혀 소득이 없이 아이들까지 양육중인데 비싼 건강보험료 납부가 너무 힘듭니다.
김주원	건강보험과 국민건강의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이옥규	피부양자 자격요건 중 소득금액 상한선 상향조정, 또는 3,400백만 원 환원 등을 통한 정상화를 원합니다.
남상성	퇴직자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증가 고민 해결 방안은?
차동원	왜 치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가?
황은정	10년 차 보험설계사입니다. 실손보험 손해율 누구의 탓일까요?
정명희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왜 차별이 있나오?
장순영	실손보험을 원하는 자에 한해 건보공단이 책임져줄수 없는가?
임도영	해외 거주자의 건강보험료도 현실화 해서 국내에서 사는 국민들과 형평성을 맞추어 주십시요
김동현	과도한 실손의료비로 인해 보험금이 악용되는게 안타깝습니다.
윤영미	산정특례 왜 5년에 한번씩 연장신청을 해야하나요?
송영주	건강보험은 건강관리를 잘 함으로써 병원출입을 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가?
하미선	보험료가 싸다고 4세대 실비보험으로 유인해 놓고 매년 15% 인상을 자행하는 보험사들, 이대로 괜찮나요?
유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주세요
이미숙	왜 의원에선 진료방법을 정하기 전에 '실손보험 가지고 있냐'는 질문 먼저 할까요? 비급여진료비용의 상한선은요? 누가 정하나요?
오세규	건강보험 개편 -> 향후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자에 미리 어떻게 대비할까요?
박주영	실손보험 강제 전환과 관련해 보험사가 그들의 주장 처럼 적자인지 내역을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박주영	실손보험 보험금 미지급에 관해 개인과 보험사 간의 다툼이 아니라 보험사와 병원 간의 확인으로 바꾸어야합니다
박용진	병원간병비는 왜 의료보험에서 지원이 안되나요?

손희령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는 행위에 대한 수가를 받는데 영양사가 영양상담을 진행할 경우 왜 무료로 진행할까요?
고서희	생리대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허재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는 자동차가 왜 재산일까?
오기수	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걸로 실손보험 개정이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개정을 막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주연	의료실비는 왜 꼭 발품을 팔아야 돌려받을 수 있는가?
김윤복	암보험과 실손보험의 문제 개선은 확실히 필요하고 과대광고도 저지해야 합니다.
박종기	실손보험 개정안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승국	보험 실비 처리 간소화 정책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진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가 너무 아깝습니다
송인범	살인적인 실손보험금 인상 정치권은 왜 관심가지지않나요?
조성용	직장을 잠깐(6개월정도) 다녔다는 이유로 퇴직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주부에게 매년 11월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것이 불합리하여
	문의 드립니다.
배혜정	건강보험의 허점, 재산은 많아도 보험료는 '0원',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배혜정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의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김은영	모두에게 합리적인 보험 체계는 있을 수 없는 것일까요?
김윤복	보험에 대하여 불만입니다
김세진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 관련해 차별없이 국민이 체감하고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있나요?
김준배	의료보험 의 개선을 바랍니다
이율아	한국도 일본처럼 수술비 상한제를 도입 하기를 희망합니다.
김효종	의료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윤경	한국의 실손보험.. 정작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거 맞나요???
김새롬	언제까지 암보험, 실비보험을 사적으로 추가로 들고 살아야 할까? 국가보험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불가능한가?
정윤묵	의료기관(병원)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낮은 건강보험 의료수가 정책 고집 언제까지 할 것인가?
류이현	여성 유방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도, 남성의 여유증과 마찬가지로, 보험 적용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상수	의료 보험 수가 조정에 관해, 의료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소재한 의료 기관에게 같은 질환 치료에도 더 많은 수가를 지급하여 의료기관의 지방
	이탈을 완화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지희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는 세상 … 건강보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박은녕	1형 2형에 관계없이 당뇨질환자로 판명이 되면 연속혈당 측정기 사용에 있어 보험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김명재	암보험 등의 일반 민간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산정되나요?

특수질환

김주환	아기들의 진료비는 왜 무료가 될 수 없나요?
황성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치병 환자들의 의료비를 어느 순간까지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까요?
조무현	암환자 산정특례가 2년 동안 적용되는데 그 이후는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경남	언제쯤 암환자의 로봇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될까요?
박두호	효율을 위해 마음을 삭제해 버린 우리, 정서가 건강한 아이들은 이제 점점더 만나기 힘든가요?
황종락	대한민국의 청소년 흡연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욱	암 등 중증환자들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복지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창교	자폐성 장애인 돌봄 서비스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수민	민주당이 마약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글과 기사등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마약 예산을 삭감한게 맞는지 맞다면 왜 삭감했는지 궁금합니다.
김인구	레켐비라는 치매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안합니다.
김우진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 제도를 요청합니다.
최근애	돈. 안드는 무료심리상담 나라50 .여가부 50 으로 운영되더군요.. 홍보해 주세요
박재홍	정신질환자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현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충분한 신체활동은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장원준	지능이 65인 아이가 지적장애 등록이 거부당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충영	정신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박상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희자	도수치료는 왜 이렇게 비쌀까?
이대영	대한민국은 왜 담배에 관해 이렇게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가??
강인규	제 가족은 중증 정신질환자입니다. 가끔 너무 힘들어 '그냥 죽어버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사라져야 할 존재인가요? 아니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나요?
이규진	만성 질환자인데...언제쯤 의료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을지...
성하은	왜 정신과 진료 시 보험에 불이익을 받나요?
이윤표	마약류 처방으로 41억 챙긴 의사 마약상 사건, 정부는 왜 방관하나요?
유기선	민간 의료보험이 없는 저소득층은 중병(암)에 걸리면 치료와 생계를 포기해야만 하는건가요?
방가영	한국이 다시 마약청정국가로 되돌아 갈 수 있을까요?
김지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살수는 없을까?
이경호	마약사범 형량을 높여서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고 음주운전도 척결합시다
김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범죄로 발전 가능한 정신질환(뇌질환) 환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경제적 지원
방가영	동네에 피부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피부과는 어디 있을까요?
지완진	어린이 건강 기본법(모든 소아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연	비만은 병인데, 왜 여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나요?

의료제도

민복기	의료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기관은 감독을 강화하고, 의료인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가형	K식품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을까?
강성록	의료는 산업인가 복지인가? 의료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국민에게 사기를 친다면 누가 어떻게 그 사실들을 해결할수 있을까?
백종한	부패와 발효의 차이점은?
이지현	치약의 연마도(RDA) 공개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종길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의약품이 품절되는 건 큰 문제 아닌가요?
이경미	중복된 처방 약을 병원이나 약국에서 걸러주는 시스템?
이영선	왜 의사가 약 처방도 같이 하나요?
홍유경	처방받은 약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 의사 약처방권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하나요?
손소희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0kcal 피자는 못 만드는 걸까요???
이주협	의약분업 이대로 좋은가?
김효진	혈세를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백신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철기	대한민국 임상실험 실태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장경순	24년 건강식품이 어느날 수입품목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검색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죠?
김도균	비만 치료제 오젬픽의 국내 가격이 왜 세계 최고 수준인가요?
장선영	왜 전문의약품은 환자가 약국의 약 재고를 확인 하려면 시간이 들까요?
박용진	사무실에는 왜 감기약 등을 비치하지 못하나요.
장서윤	건강기능식품의 가격 적정한가요? 효과는 있는건가요? 건강기능식품 홍수속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류이현	신약 등 의약품 및 의료 연구개발에서 지금처럼 수컷동물, 남성의 몸 위주로 임상실험을 계속한다면 여성에게는 부작용이 날 수도 있지 않나요?
지완진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지하철 역사, 공동주택 내 설치 확대 및 폐의약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제안합니다.

노인건강

지정구	치매환자를 둔 가족을 위한 혁신적인 국가차원의 대책이 있나요?
황건택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 중인 요양보호사는 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나요?
김민희	치매에 부모는 어느 선까지 개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유재준	치매에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위한 정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최가라뫼	내 노후는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최문희	베이비부머 끝단인 나의 노후는 요양병원이 최선일까요? 2,30년 후 요양병원 질은 현재 정도라도 유지될까요?
박순희	지역에 독거 노인들에게 같이 병원에 모실 수 있는 봉사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거동이 어려우면 의사 등 의료진들이 방문 서비스를 하면
	참 좋겠다 생각 했어요.
이순희	노인들의 쑤시고 아픈 몸, 당연하게 여기며 참아야 하나요?
서영민	실비보험이 없는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임영규	나이 들어도 지속적으로 생산에 참여해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상준	정말 안심하고 편안하게 요양원,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나서 주세요!
현종오	팬데믹 기간에 보호자들이 면회 못 오는 틈을 이용하여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 입원한 노인네들에게 불법을 못 저지르게 막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유연재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치료제 쓸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료 인력

김영호	왜 의사면허시험 약사면허시험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전공에 상관없이 공부해서 취득할 수 있는 공개경쟁시험제도로 만들지 못하는 것알까요?
김관옥	대한민국은 준 전시상태의 국가이며 중증외상은 이런 상태에서는 군은 중증외상에 대한 대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중	간병인 급여화는 가능한가요?
최준호	중증 외상 수련센터가 예산 9억 원이 없어 문을 닫을 예정이라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김다연	간호 간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안상학	간병을 국가가 보조 or 책임질 수 없는가?
이만구	의료 기피 학과 문제 해결 의견 제시합니다.
심형섭	아직도 중증외상센터 지원은 뒷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및 기후변화

환경 정책

채명숙	녹조라떼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긴 낙동강 최하단 부산입니다. 매일 수도꼭지 물 틀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이석원	꼭 성장을 해야만 하나요? 모두 성장을 바라니까 환경파괴만 하잖아요.
문재훈	배기량도 없는데 친환경차 고속도로 할인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원덕영	우리나라도 유럽선진국처럼 숲을 잘가꿨으면 합니다.
김정은	비닐 코팅은 필요한가요
송학성	인간은 지구를 파괴하며 살 수 밖에 없는가요?
유재룡	지방 소하천 우리 지방 소하천을 보면 각종 쓰래기들로 가득합니다. 특단의 조치는 없는건가요?
장은진	환경문제 같이 중요한데 당장 급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대비하지 않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죠?
곽동원	쓰레기와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없는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선우	4대강 보 철거 시급합니다.
길영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문제는 왜 제대로 지켜지지 않나요?
황인혁	담배 꽁초는 버리는 사람과 줍는 사람이 구분되어야 할까요?
윤동환	가뭄 대책은?
변희원	페트병 랩핑한 부분을 벗겨내는 게 왜 이리 어렵나요?
신성운	공공쓰레기통이 줄어들어서 불편함
이경재	우리나라 바다 연안은 모두의 연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왜 개인들이 사유하고 심지어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권익경	언제까지 분리배출하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나?
김정민	언제쯤 자동차 매연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승규	교통의 편리함이 자연의 가치보다 더 우선하는가?
양윤정	산림청에서 산림 자원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강현준	환경영향 평가를 졸속을 넘어 정부가 사기쳐서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멈출순 없나요?
민경구	빈병 환수 제도를 개선하면 재활용 극대화, 약자 보호, RE100 실행에 도움이 됩니다
정순화	해마다 녹조로 범벅되는데 낙동강 보는 왜 열리지 않나요?
도경화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 국민이 먹는 국산, 수입산 해산물은 안전한가요?
김근섭	제초제로부터 자연도 살리고 쌀 소비도 늘리자.
김수진	4대강 보를 철거하고 이명박에게 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안 되나요?

이경미	새만금 간척 개발 30년 평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배명순	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왜 낙후된 지역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최가라뫼	동해에 해상 항구를 만들면 어떨까요?
황동현	왜 백패킹 / 노지 야영 캠핑 장소는 검토, 토론도 없이 막기만 하는가요?
김심동	지구가 많이 아파요... 왜 다들 모를까요?
김환식	거리의 쓰레기는 왜 계속 버려지는가?
여경희	왜 소비자만 쓰레기 줄이는 데 힘을 빼는가?
임도훈	전 정부에서 4대강 보 철거를 결정했는데, 왜 아직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을까요?
남궁호	왜 해양산업은 항상 동부권에만 집중적으로 진행되는가? 서부권 역시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전혜정	쓰레기를 원자단위로 분해할 수 있을까요?
전혜정	회사들의 공병제 대신 리필샵을 요청합니다. 환경오염의 해결방향으로도 기술발전을 원합니다.
안정희-p3m3p	지구 온난화 문제와 더불어 친환경 유기농 방식을 통한 영양이 골고루 분포하는 농산물 생산과 건강식품 생산을 위한 노력
박용식	제주도 남쪽 7광구 석유 시추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신호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박선희	무분별한 개발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진행되어야 할까요?
김혜진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방법을 연구해주세요
서효란	물품에 붙여진 부착물 떼느라 힘든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박태순	대로변 휴지통은 없는 게 좋을까요?
최병성	대형 산불, 산사태, 재선충 등의 산림 재난은 잘못된 산림 정책 때문입니다. 국민 안전과 건강한 산림을 위해 민주당과 농해수위 의원님들이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박준태	산꼭대기에는 소화전을 만들 방법이 없을까?
장용창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예산 확보 경쟁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백기덕	환경-낙동강 인근 주민 절반이 코에서 악성녹조 검출?
김세호	발치된 치아 재활용 가로막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 바랍니다
김현주	왜 우리나라 길거리는 더러운 걸까요?
안재현	산불 예방과 재빨리끄는 방법 화마 를 제압 할 의지가있는지요
최원철	4대강 보를 철거하지 않고 녹조 등 오염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강빈	우유곽 수거함 따로 둡시다
신재호	불법 쓰레기소각 강력 단속 필요합니다.
오희경	종자주권국이될수있을까?
김윤수	축사보다 더 치명적인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한 거리 규정과 감시는 왜 없을까요?
차여진	왜 지자체는 나무를 옮겨 심지 않고 다 베어 버리나요?
김창희	현재 진행중인 분리수거 재활용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JinWooKim1000	농촌으로 들어오는 폐기물 시설 문제, 왜 이 문제를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는 거죠?
김민지	개인이 하는 환경보호,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오용석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왜 우리는 환경과 산업이 서로 배치된다고 생각할까요?
김성근	고속도로 위에 펼쳐지는 친환경 스마트시티 건설을 제안합니다
강승수	어떻게하면 유기농사가 자본의 논리에 굴복하지않고 생명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을까요?
윤정희	일회용 사용을 해야만 한다면, 용기를 만들 때부터 좀 더 재활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은 어려울까요?
김정환	환경파괴 주범에게 환경정화를 맡기는게 말이 되나요?
도완영	쓰레기는 지방에 보내야만 하나요?그것도 지방의 그 지역 주민들 분열시키면서요?
지완진	폐의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폐의류 수선 산업 활성화 , 저개발국가 폐의류 수출 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산에 나무가 많아졌는데 언제까지 두고 보기만 할겁니까?울창한 숲을 세계적인 자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우람	말 못 하는 소나무를 대신하여 외칩니다. 소나무는 억울하다!
도완영	소나무 재선충 방제시 왜 소나무에 화학농약 방제만 하나요?다양한 방식을 시험해보고 그 이후 현재에 이른 지금의 결과에 대해서도 국회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우진	인류가 배출하는 비가역적 폐기물에 대한 환원 문제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박은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진형원	4대강 사업, 특히 낙동강 인근의 보 해체작업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복남	환경변화의 위험에 대비하기위해 국가가 다른나라의 땅을 구매하면 좋지않을까요?
김성현	우리나라의 호랑이 복원은 불가능한가?
노승방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강대성	매년 3월중순부터 한달간 전국산불강조기간 및 감시를 실시하는 법령을 제정해야합니다
지완진	2025년 내에 LED조명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제도 강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가 생각합니다.
박미경	오랫된 나무를 함부로 자르지 못하도록 가로수를 보호해주세요.
김주연	산촌이 무너진다면 산림의 기능도, 지역의 회복력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산촌 문제를 '지방의 소멸'로만 보시나요, 아니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차원에서 바라보시나요? 지금, 산촌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투자하거나 제도화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방향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거점산촌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림도시와 같은 차별화된 접근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주연	산림을 위한 정책에서, 지역과 사람을 위한 정책으로: 산림정책, 이제는 지역이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경민	산불 진화장비 너무 초라한 듯 합니다ㅠ.ㅠ
오고니	산불예방으로 인터넷이나 전기가 끊겨도, 자동 혹은 원격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태양광 패널과 연결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을까요?
오고니	가뭄 해소와 강물을 흐르게 하기. 이 둘은 동시 존재가 불가능한가?
유성귀	언제까지 불 진압을 인간들이 할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AI로봇을 적극 이용해야 하지 않나요?
김원희	산불.산림에 대한 접근을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영역으로 양지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배영민	산불 진화 될때까지 모든 시위 및 정쟁을 멈추고 안동으로 모여주십시오. 산불진화에 온힘을 쏟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신동호	산불과 지진, 태풍, 홍수 등 재난, 재해 대비. 모든 주택 화재보험 의무화 추진이 필요합니다.
정승인	재난 대비를 위한 예비 인력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것 같아요.
도완영	이번 대형 산불 원인 중 하나가 산림청의 조림 정책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산림 조합은 혹시 여기에 어떤 역할을 했나요?
임강호	산불 진화용 항공기 부족 및 노후화와 부품 수급 문제,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장규홍	문화유적지 보호를 위한 방화림을 조성하면 어떨까요?

지완진	라돈 오염 사각지대(지하 휴게실, 각종 지하 전기 · 기계 설비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완진	해양 미세 플라스틱 주요 원인인 폐어구 문제 국가 심혈을 기울일 만큼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영찬	지정폐기물중에서 소각도 안되고 함부로 매립도 안되는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허영란	김, 미역 양식으로 역대급 플라스틱 오염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바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석철	세상의 모든 스티커는 잘 떨어지게 만들자.

에너지 전환

신동훈	체코 원전 저가 수주라는데 왜 하나요?
신윤식	원전은 왜 나쁘고 위험하다고만 할까요?
김준현	최근 독일 제조업 몰락 이유가 러시아산 파이프 가스 차단이었는데요. 미국산 카타르산 LNG가 3배 비싸죠. 우리가 러시아산 파이프 가스를 쓸 수
	있다면 에너지 경쟁력에서 큰 경쟁우위를 갖을수 있는데 우린 왜 시도도 못합니까?
황병준	RE100 하려면 ... 고도제한 10배 더 높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현석	대한민국은 언제나 무탄소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 100%를 달성할 수 있을까?
장순영	160억 예산 들여 만든 풍력발전기, 이대로 괜찮나요?
윤태영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소 절대농지에 설치 할수 있는 방법? 문제는??
최가라뫼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애	핵분열 에너지 원전 과 핵 융합에너지(. 태양...)그것도 홍보해 주세요
최근애	RE100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세요
장창덕	공공시설, 건물의 냉난방 제한이 지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효과적인 게 맞나요?
황민수	왜 대한민국 재생발전량 점유율이 늘 OECD 꼴찌인데 국민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황민수	독립 상가에 태양광 지원사업은 왜 없는 걸까요?
황민수	태양광 발전의 가짜 뉴스는 왜 사라지지 않고 확대 재생산되는가?
황민수	주택용 전력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은 왜 없는가?
황민수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 단가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가?
최선호	민주당의 원전정책(감원전 또는 탈원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근섭	딸기농장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하여 농촌 소멸을 막자.
김새롬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 안 하나?
김민중	태양광 설치에 따른 장애 요인이 해결되어야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창묵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방향은 적절히 준비되고 있는가?
이수열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확장해야할까요? 필요한것일까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것일까요?
김명웅	천문학적인 원전 지원 사업! 이대로 좋은가?
정덕수	정부 주도형 태양광사업의 엄청난 효과 에너지 고속도로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박민우	신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고 있나요??
이경미	재생에너지 생산과 송전선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기도	국가가 개발해야 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적인 탈원전 신재생 발전소를 서민이 개발에 성공했고,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왜 정부는 그것을 지원하지 않을까?
윤병웅	대한민국 에너지 독립 가능할까요?
지승현	민주정부가 추진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지금까지 해 온 전통적 방식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라야 할까요?
손지나	해상풍력개발지역 주민들의 생계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문서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REC폐지라니 왜 도대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자를 못 잡아 먹어 안달이냐?
김새롬	학교 복도와 화장실은 언제 시원하고 따뜻해질까? 제로에너지 학교는 언제 지어질 수 있을까? 우리 나라도 언젠가 목조 학교를 짓는 날이 올까?
정윤묵	영흥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요청 합니다.
김윤	태양광 설치 위치를 전국 고속도로 일직선 라인으로 설치하면 안될까요?
문영석	신재생에너지의 REC는 왜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인정이 되나요?
이병엽	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의 국가 에너지 정책과 전략 마련의 필요성
김동준	태양광, 수력, 풍력, 압력, 진동 등의 모든 전기에너지발전시스템을 활용하여 독립적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최종적으로는
	가장 작은 단위의 에너지발전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에너지가 차단되더라도 큰 혼란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namu-hana	태양광패널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된다고 봅니다.
소미경	전력시장의 심판자로서 전력거래소가 “중립성”을 위반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소미경	한국전력시장은 언제쯤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그리드패리티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소미경	2025년 2.24일에 국힘당 강승규의원외 12명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소미경	전력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REC시장에 강제로 개입하여 REC가격을 억제하면서 수요와 공급법칙을 파괴해 왔는가? 위법. 탈법적으로 REC가격을
	폭락시켜 왔는가?
소미경	RPS제도에 의해 REC를 매수해야 할 처지에 놓인 한국전력이나 의무공급사인 한전자회사와 RE100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힘당은 지금
	무슨일을 하려고 하는가?
소미경	대한민국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비중이 겨우 5~6%로 OECD최하위로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전세계는 대부분 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비중이 최소 15% 이상이다)

기후 위기

이은경	왜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고민만 할뿐 구체적으로 이행하는데, 유난스럽다고 생각할까요.
KIM PARK	일분 일초가 시급한데 왜 우리는 지구온난화에대해 적극적이지 못할까요?
최현영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이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얼마나 있는가?
곽정인	기후변화의 시대, 앞으로는 식량이 무기가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농촌문제를 강건너 불 보듯 하고 있나요?
박종권	기후위기대응 너무 늦습니다
김승현	기후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실용적인 방법들을 우선 합의하고 실행해야 할까?
박남태	혹시 지구를 둘러싼 인공위성, 우주쓰레기는 지구 온난화에 전혀 관계가 없나요?
윤철원	탄소중립과 RE100 관련 대책수립 및 성과는 너무도 미흡하여 미래가 암담한 지경인데, 에너지정책을 향후 어떻게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인가?
김부일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완영	탄소 크레딧 시장 활성화로 지방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수 없나요?
이현수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김영호	제가 기후위기 일을 해봐서 아는데 여행 비행기 이용부터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김영호	비행기여행을 죽어라 하는데 어떻게 기후위기 탄소를 줄이자는 겁니까?
홍진숙	우리는 언제나 기후위기의 공포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나요?
황민수	어쩌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기후 악당 국가가 되었는가?
황민수	우리나라 기후 목표는 파리 기후협정에 부합하는가?
지현이	미래 식량 안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황민수	대선 후보는 왜 TV 토론에서 기후위기를 말하지 않는가?
안성호	기후변화를 위한 양봉인 대책은 없나요?
최윤정	정부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책, 대안이 있을까요?
김석태	CCUS에 대한 체계적인 상업 모델 구축이 필요해요.
김주연	기후 위기, 자원 위기 없는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수준은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구강영	에너지부 장관직 신설, 직선제,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성있게 2050 탄소중립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박성수	기후위기는 정말 극복될 수 있을까요?
도완영	일본의 기후 위기때문에 생긴 식량 물가 위기 뉴스를 봅니다.식량 생산 기반 이대로 괜찮나요?
도완영	기후 재난이 매년 올거라고하고 그에 따라 식량안보도 현실화 되었습니다.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부총리급 부서로 격상시키는건
	어떨까요?
김성근	기후위기, 기후온난화 해결책은 독일처럼 주4일 근무를 하면 됩니다.
박상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성수아	이제 0.5도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언제까지 방관할 건가요?
김태관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주연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위기 시대, 나무 한 그루가 국가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정재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군시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지완진	국회의사당 앞뜰 기후위기시계 0 가리키기 전_ 현수막 사용 점진적 금지 제안
박중록	기후위기 시대! 대규모 자연파괴, 난개발은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

최소정	우리는 언제까지 일회용및 플라스틱 사용을 멈출 수 있을까?
김정화	장례식장 일회용품_돌아가시는 분의 입장에서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남기고 돌아가시고 싶으실까요?
이현규	우리나라도 일회용 음료용기 재활용 보상 시스템을 도입할 순 없을까요?
마상욱	일회용 커피컵 대신 다회용 텀블러를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더 많이 찾고 적용하면 어떨까요?
임정은	일회용품 보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듭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더 강력하게 법제화할 수 없나요?
김태영	음식점 일회용품 저감대책에 관해 의견드립니다.
지완진	2025년 내 환경부_화장품 용기 , 액체 식품류 용기 100[%] 재사용 방법 도입 및 시스템 마련을 촉구합니다.
gabrielleoh3198	모든 음료업체가 공유하는 재사용 공유 텀블러 제도 & 수거제도를 만들면 어떨지?
NewCreation1128	복합소재 사용을 금지하고 일회용품은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hooponopono7942	개인 선의' 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무는 순환경제 정책으로는 앞으로도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국제 관계 및 외교

외교

정혁중	러시아와의 무역 정상화가 가능 할까요?
박현정	트럼프 대통령님. 당신은 왜 대한민국이 현금 자판기라고 했습니까?
정구학	북미수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여 제2의 경제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안상학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 시 미군 함 건조를 국내 건조 시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협상할 수 있는가?
임호균	미국 주도 세계화의 종말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안태환	트럼프의 외교노선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대응이 어떤지 대중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범	민주당은 왜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려고 하나요?
설민영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으면 평화가 오나요?
이상미	민주당은 왜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자고 하나요?
곽성용	미국의 관세 인상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손정빈	이재명 대표 범죄자 취급한 미국의 수장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천	트럼프 노벨평화상을 정말 추천하실 건가요?
하인철	이재명 대표는 미국의 보고서에 왜 대응을 하지 않나요?
이찬슬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한결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한 미의회보고서 항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유민	민주당은 왜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려고 하나요?
김민선	정말 트럼프한테 노벨상을 주실건가요?
이종오	트럼프가 노벨평화상 받을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승민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취급한 미국 의회에 항의안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나인	미국이 관세를 25% 올린다던데 대비책이 있나요?
박민아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미국 의회 보고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정현	미국 의회보고서에 나온 이재명 대표 범죄자 명시에 공식입장이 무엇인가요?
윤태은	왜 미국에 할 말을 못하나요?
이재명	민주당은 왜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려고 하나요?
박규준	미국의 세계적 권위가 약해지고 있음에도 왜 민주당은 미국을 추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인가요?
박준영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범죄인 취급한 미 의회보고서에 항의와 대응을 안하나요?
강태웅	왜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려고 하나요?
김성훈	이재명은 미조사국의회보고서에 왜 무대응인가요?
한수진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고요?
최예진	트럼프가 노벨평화상 감인가요?

민소원	트럼프 대통령을 왜 노벨평화상에 추천하나요?
임대한	트럼프에게 왜 노벨평화상을 주려하는지요?
강우주	민주당은 왜 트럼프가 노벨평화상 대상이라 생각하시나요?
안정은	미국 내정 간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류우승	민주당은 왜 미국에 아무런 저항을 안 하나요?
최수진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미의회조사국 내용 보셨겠지만 범죄인 취급에 대해서 당당히 얘기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채린	미국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요?
류우승	민주당은 왜 트럼프를 노벨평화상으로 추천하나요?
조두윤	미국한테 왜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나요? 너무 답답해요
김용환	지금 야당은 왜 이렇게 미국에 수세적인가요?
김성윤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박민채	노벨평화상에 트럼프를 추천한 근거와 의도가 무엇인가요?
백륭	이재명 대표님! 지난해 12월 미국의 의회조사국에서 대표님에 대한 폄훼 발언을 한 것,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소추안을 추진할 때 골든버그
	미 대사가 대표님께 한덕수 체제를 지지한다고 한 것, 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매우 치욕스럽고 화가 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서영	민주당은 미국에게 항의할 생각 없나요?
안유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범죄인 취급한 미 의회보고서에 항의와 대응을 안하나요?
윤겨레	트럼프가 인류 평화를 위한 일을 했나요
김조은	민주당은 왜 미국에 아무말도 못하고 있나요?
신혜선	민주당은 왜 이재명 당대표에게 모욕을 준 미국에게 제대로 항의하지 않나요?
기승은	미국 의회 보고서에 왜 항의하지 않나요?
송예인	우리나라 민주당은 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추천하려고 했나요?
김민정	미국 의회에서 이재명 대표님을 범죄자 취급하고, 대통령 자격을 운운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메세지만 전하는 것입니까?
김신영	민주당은 왜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을 추천하겠다고 하나요?
이현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범죄인 취급한 미 의회보고서에 항의와 대응을 안하나요?
조성진	민주당은 왜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자고 할까요
한채희	민주당은 왜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겁니까?
신은진	미국 의회 보고서에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취급했는데 민주당은 어떤 대응을 할 생각입니까?
한은혜	민주당은 왜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려고 하나요?
김소담	미국 눈치 보기 언제까지 할 건가요?
이진한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 있지 않을까요?
김진태	미국 대통령에게 강하게 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진태	미국이 잘못 선택한 대통령 트럼프 윤석열과 동일인 나쁜 사람 미국은 2년~3년 이내에 돌풍이 불 것입니다.
한그린	민감국가 지정관련 의견입니다.
이기범	선고기일과 이재명 대표의 형량까지,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문한결	박선원 의원의 제보가 사실인가요? 그런 외국 인사의 간섭이 우리나라에게 영향이 큰가요?
이종오	박선원 의원님의 주한미대사 내정간섭 제보 충격입니다.
김학률	미국이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제1야당 답게 가까운 나라 대사의 주권 침해 발언에 당당하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한은혜	박선원 의원이 미국 내정간섭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민유민	제1야당으로서 미국의 내정간섭을 끊어내주십시오!
이현채	미국의 내정간섭 반드시 끊어내야합니다.
김민선	미국의 내정간섭 끊어내야 합니다.
현승민	박선원 의원이 최근 밝힌 친한 국가의 대사관료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승은	우리나라는 주권국가입니다.
이기성	미국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고서연	미국 내정간섭의 증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동맹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조서영	미국의 내정간섭 밝혀내고, 끊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김성훈	박선원 의원의 제보(미국의 내정간섭)에대해 민주당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재명	박선원 의원이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보했습니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것인데, 제 1야당으로서
	당당하게 내정간섭에 대해 항의하고, 멈춰내야합니다
길정혜	할말은 좀 합시다! 자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남준현	국익 중심 외교가 필요할 때 입니다.
김수형	최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밝힌 제보가 사실인가요?
민소원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처하세요.
김조은	박선원 의원이 최근 밝힌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은진	국민만 보고 가세요. 미국의 내정간섭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 미국이 아닙니다
조두윤	박선원 의원이 말이 사실인가요?
백륭	우리나라는 자주독립 국가입니다.
윤민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대응을 하실건가요?
손정빈	박선원 의원의 충격적인 폭로, 미국의 내정간섭에 강력히 대응 하십시오.
박준영	내정간섭에 대해 당당하게 항의하세요
김한경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의 여론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전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속히 내정간섭에 대응해주세요
박근하	민주당이 더 자주적인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한수진	미국의 내정간섭이 도를 지나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강태웅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해서 제 1 야당이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요?
곽성용	캐나다, 멕시코, EU의 공통점 미국에 맞서 싸우는 국가들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다솜	박선원 의원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크게 침해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혜선	민주당은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응하지 않나요?

이해천	미국 내정간섭 동의하시나요
이예진	미국의 내정간섭에 더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최예진	미국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김나인	미국에 당당히 목소리 내셔야 합니다!
문채린	박선원 의원의 폭로를 유의깊게 들어야합니다.
박민채	미국의 도 넘는 내정간섭을 끊어내야합니다.
조성진	미국의 내정간섭명백한데 항의해야 주권국가 아닐까요?
김용환	야5당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왜 단호히 거부하고 규탄하지 않습니까
김민정	미국에 할 말 하는 민주당이 되어주세요!
윤겨레	국민의 뜻은 자주입니다
김성윤	미국의 내정간섭이 너무도 명백한데 왜 당당히 항의하지 않나요?
박민아	주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한채희	미국의 도가 넘은 내정간섭,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수민	미국의 내정간섭을 강력히 규탄해야합니다.
방가영	일본과 중국의 역사 날조 & 왜곡을 AI 시대에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박근용	몇십년간 선진국으로 갔던 워홀.....이미 선진국 문턱에 있는 한국은 왜 워킹홀리데이하는 젊은 외국인들이 없나요?
김규창	한국에 온지13년이 되었는데 한국 국적도 없이 언제까지도 한국 국적을 공부로는 딸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명희	외국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정책 .. 이대로 괜찮은가? (먹튀 논란, 호구 논란)
김우종	외국인 투표권 제한하는 게 맞지 않나요?
홍인기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 통계를 1세별로 제공해도(현재 5세별 제공) 미등록 이주배경 초등학생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홍창효	우리의 향토유산 왕벚나무는 어찌하여 '일본 왕벚나무'가 되었나?
황규원	우리의 시간을 돌려주세요.
도경화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 국민이 먹는 국산, 수입산 해산물은 안전한가요?
KIM HAE KYUNG	일본 핵폐기물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최재혁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박소연	언제까지 일본과 같은 시간을 써야 하는가?
윤성진	일본의 난민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인다면 어느 지역을 관리 수용소로 할 것인가요?
김영호	왜 간도와 연해주는 외교로 되찾지 못하나요? 왜 백두산 절반을 중국에게 빼겼나요?
박용진	중국산 배터리에 왜 보조금을 지급하나요?
전상훈	중국은 한국에 무제한으로 게임과 소비재 상품을 팔고 있는데 한국은 왜 중국에 하나도 못 파나요?
김영호	이재명 선출직 공무원은 대통령이 되면 백두산포함 간도와 연해주를 외교로 찾아올 건가요?
김영호	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대마도, 백두산 포함 간도, 연해주를 찾아올 생각을 안 하나요?
김상업	극우와 일부 2030은 왜 중국을 적대시하는가?
박병일	민주연구원은 왜 중국공산당 당교와 협력 교류합니까?
심승우	중국 제조업 부상과 균형외교 (문정인 정세현 두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박향미	모든 정책에 각국 상호주의를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최연욱	삼일절엔 일본 비판하면서 유엔결의 위반 이스라엘로 무기수출은 계속하네요?
성채린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해양경계 획정 협상에서 더 많은 수역을 차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구조물을 설치해서
	이에 대비할 수는 없는건지?

이주민

정선아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나요?
SR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여러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복무의 중요성이 이러한 이점들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손	선천적 복수국적을 아십니까?
신승하	장기 거주 제외 국민 자녀의 출산 장려금 지급 정지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윤성환	중국 거주 한국인의 불안감 왜 우리는 자국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고 느낄까요?
홍창효	외국에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귀국은 왜 어려울까요?
정진규	대한민국은 해외 동포의 이중국적을 왜 허용하지 않나요?
이경희	무국적 고려인에게 한국국적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JOHN J KIM	왜 유리는 이재명 대표의 연설의 성장 정책등에 관하여 재외국민도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성규	해외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동포들을 위해 해외동포 포용정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주	우리나라는 왜 해외 이주민들의 이중국적 획득을 다른 나라들처럼 쉽게하지 않나요?
서경태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및 재외국민이나 교민들에 대한 갑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상학	중앙아시아 고려인동포들을 지방에 적극 유치 하는 방법이 없는가?
서경태	현재 외교부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추가로 재외동포청이란 조직이 필요할까요?
유재욱	고려인 이주 및 고려인 4세 비자 발급 제한의 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순희	영사관 접근성이 나쁘다. 왜 영사관이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지않고 비싼 동네에 있나?
박철희	고려인 후손 국내 입국 지원책 혹은 특별법안이라도 입안하려 주시길 간청합니다
오윤성	한국인+외국인 결혼 2세는 한국국적 주는거 찬성 외국인은 한국국적 주는거 반대 지금 베트남 여자들 결혼해서 국적얻고 이혼해서 베트남 남자랑
	결혼하는데 이런거 막아야죠

국가경쟁력

곽대종	두바이 원전의 손익계산서와 체코 원전 수주의 계약 상황은 왜 알려져 있지 않나요? 민간기업 형태이지만 사실상 공기업인 한전이 주체인데....
이정훈	왜 우리나라의 브랜드 파워가 낮다고 생각할까?
김은정	한국의 위상은 어디로 간 거죠?
김진욱	자국우선의 세계질서에서 민족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제일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이주환	경제 10대 강국인 나라의 주식의 총합이 미국 한기업 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 인가요? 자본시장 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교란 시키는
	사람이나 단체의 위법에 대해서 처벌이 왜 약한가요? 돈있는 자들을 동경 하면서 동시에 멸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현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김영호	왜 대한민국 바다를 '대한민국해'로 공식 표기하지 않나요?

박세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매력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권제세	예속 국가를 벗어나려면?
최가라뫼	영사관에서 한국의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판매하는 건 어떨까요?
유현석	우리는 세계시민이 되기위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신범진	제7광구는 이대로 일본으로 넘어가야 하는가?
이기식	아시아 금융주권을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방법론은 없을까요???
문고훈	한국의 세계 경제 관련한 협력 기구나 협정을 못 만드나요?
김민정	이재명 대표님의 외교철학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디지털 사회와 정보화
디지털 플랫폼

황건구	왜 우리는 목숨을 건 단식 투쟁보다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인터넷 상의 혐오에 더 귀기울일까요?
이요한	가짜 뉴스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절실합니다.
허재원	가짜 (허위) 뉴스 (정보) 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손상훈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등의 도박성을 왜 게임사의 자율에 맡겨야만 할까요?
김은정	극우 유투버와 가짜 뉴스들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합니다.
이지은	왜 가짜뉴스 방지법을 만들지 않는가?
양창월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없나요?
김동욱	2찍들은 왜 가짜뉴스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권형민	상식과 비상식의 혼돈을 해결해야합니다
최원석	우리나라 언론은 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쓰나요? 가짜뉴스를 없애지 못할까요?
지련	가짜뉴스를 기획, 유통 시키거나 이것을 인용하는 언론을 처벌할수 있는 법과 이런 가짜뉴스로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심각성을 교육할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노학성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인터넷 댓글은 사라질 수 없나요?
최정환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은 왜 개발하지 않거나 활성화 되지 않은지요?
이계언	가짜뉴스 확산을 막아 주세요.
지현욱	유튜브나 언론의 어그로 끄는 자극적인 제목,가짜뉴스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강력처벌이 안되나요?
김지현	어떻게 하면 모두의질문Q가 정말로 모두의 공론장이 될 수 있을까요?
송상훈	Real-time fact check
민경구	fake news, 가짜뉴스 처벌에 대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	잘못된 기사들에 대해 마땅히 필요한 사과나 후속 제재 등은 없나요?
유경완	커뮤니티와 SNS를 미성년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손정훈	가짜뉴스의 확산을 어떻게 억제하고 막을 것인가?
장억진	가짜뉴스가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없을까요?
김대현	유튜브 페이스북… 전세계를 병들게한 가짜뉴스로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김정민	가짜 뉴스를 통한 언론 조작을 원천 차단할 법규정을 만들 수는 없나요? 진실만 듣고 싶어요.
박창용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등급 심사 과정을 국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 방법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위원이 되는건가요?
이경진	재능기부 플랫폼에 대해 질문합니다.
정선구	배달앱, 숙박앱등의 배불리기는 이제 그만 해야할 때인것 같습니다.
이윤주	가짜뉴스 해결방법은 없는걸까?
김명선	언론개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짜뉴스와 기레기 타파 방법은?)
황건구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플랫폼도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김정민	가짜뉴스가 사라질 방법은 없을까요?
기준수	사용자가 많은 익명성이 보장된 커뮤니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신상정보를 확인하여 처벌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승우	가짜 뉴스 즉 팩트 체크가 안 된 뉴스나 유튜브 뉴스가 넘쳐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김도형	디지털 세상 속 견제와 균형을 구현해 내야 할 것입니다.
전상훈	왜 인터넷 망사용료가 한국만 매우 높은가요?
이영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혐오적 발언을 제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길수	가짜뉴스는 사라질 수 없는 건가요?
오한열	미디어나 sns에서의 거짓말(가짜 뉴스)를 방지하거나, 처벌할 수 없나요?
현정임	가짜뉴스, 음모론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면 한국 젊은이들이 가짜뉴스에 쉽게 속지 않고, 모든 사안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박태영	가짜/왜곡 뉴스의 뿌리를 뽑는 방법은?
나세진	가짜 뉴스와 음모론은 왜 근절되지 않는가?
안태오	네이버 카페 도용되는 아이디가 너무 많습니다.
김철환	명백한 가짜뉴스로 판명되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시도할 수 없게 강력하고 빠르게 처벌할 수 없을까?
이은경	검색 사이트에서 얻는 정보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흔한아재	요즘 아이들의 숏츠 유튜브 중독의 문제점
박장보	사이버 내란의 관리가 필요 하지 않나요?
조선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곽재욱	딥페이크, 가짜 뉴스에 대해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 플랫폼 회사에 게시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으면 안되나요?
우상규	사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가짜 뉴스를 생성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요?
문정호	가짜뉴스 생산하는 언론 유튜브 채널 해결 대책은 뭡니까?
이은숙	거짓을 퍼트리는 언론은 처벌을 해야하지않을까요?
김신호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이요원	뉴스 기사에 평점 주기 항목을 생성하여 기사의 정확도나 신빙성에 대한 평가를 국민이 직접 준 집단지성의 평점이 뉴스의 가치가 되는 세상은 어떨까요?
최선미	포털도 책임 져야죠?
장운영	지역소상공인 정보 교류 플랫폼이 있나요?
고다원	허위정보를 진실인듯 떠들어대는 유튜버들에 대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김형일	가짜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역할은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현식	특정한 이익이나 이윤을 얻기 위해 가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를 제재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이주한	정부 기관을 만들어 인터넷 상에서 만들어지는 가짜뉴스에 관한 '팩트체크'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네이버 모두 사이트(modoo) 종료에 따른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유성귀	토론중 실시간 팩트체크 할수있는 AI GPT 답변팀 만들어주세요
김종갑	NotebookLM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방송중에 아무 말하는 패널 걸러 낼 수 있게 실시간으로 화면상에 팩트체크하는 AI도입을
정인규	가짜 언론에 대한 처리 방안은 ?
양하윤	쿠팡은 왜 환불 처리가 느릴까요? 특히 주말에?
이성규	가짜 뉴스를 방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절실합니다.
주진택	카톡 이용에 관한 질문?
조윤정	가짜뉴스 보도, 언론을 통한 광고인가? 비판인가?
이정석	유튜브와 같은 대안 미디어는 가짜뉴스 또는 진실을 활용해 어떻게 우리를 정서적 극단주의(극우극좌)로 만들어 가나요 ?
박창영	신문기사를 쓸 때, 기자들이 제발 전체 데이터를 보게끔 법 좀 만들 수 없을까요?
이동훈	왜 가짜뉴스와 진실을 왜곡한 보도들을 좌시만 하나?
김민정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대로 괜찮나요?
이은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유동적인 돌봄 플랫폼이 있으면 어떨까요?
김은경	가짜뉴스 유튜브에 중독된 아버지를 어떻게 구할까요?
서인찬	왜 국내에서 제대로된 구글지도를 사용하지 못하는가?
김정민	가짜뉴스 엄벌 가능할까요?(외국인 의료지원 등등)
최기호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상시적 정부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정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허영란	가짜뉴스 나몰라라 하는 플랫폼 기업들, 이대로 놔둬도 될까요?

디지털 행정

이민석	공공기관 홈페이지 UX 어떻게 안될까?
김용훈	해촉증명서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서류일까?
이준섭	대한민국 행정의 온톨로지화가 가능할까? (전자정부 업데이트)
최선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이 바뀌어야 합니다.
김영호	왜 독재의 잔재인 국가정보원을 해체하지 않나요?
송치현	주민소환 온라인 서명 활성화와 온라인 서명 실효성 확보방안 (보안 및 해킹)을 제안합니다.
이진	사이버 안보를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는가?
남궁정선	국가/시 지원정책을 좀 더 많이 알릴 방법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윤주	한전에서는 왜 납부 금액과 납부 계좌를 한 번에 알려주지 않나요?
한명우	한국형 DSA (디지털 서비스법) 신설과 한미협약 체결 요청에 관하여
이진숙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왜 안 되는가요?
김영준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가?
조경호	주택 등기부등본의 국가 공인 신뢰 받게 할 수 없을까요?
김태준	도로공사를 위시한 공공기관의 불투명한 운영 정보공개 회피, 이대로 괜찮은가?
이수해	실비 보험 환급의 전산화!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윤성원	공공 웹사이트는 왜 최종 페이지를 찾을 수 없는가?
주성호	많은 민원들을 공유와 구분하여 처리를 투명하게 할 수 없는가?
윤성원	왜 공공서비스는 근본적으로 다시 디자인되어야 할까요?
조정행	왜 우리만 복잡한 인증 제도와 시스템을 갖고 있을까요?
조미리애	우리나라 행정망 사고와 대책 적절한가요?
김세진	등기부등본을 좀 단순히 참고자료가 아니고 위조하지 못하게 시스템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고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절차로 다양하게 업무로 활용되는데 엄격하게 관리가 필요해요.
김상국	공공기관의 소액 계약에 제출되는 서류가 왜 통일되지 않나요?
최의찬	등기부 등본 만으로 안전하게 부동산 매매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인식	공공문서 서식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쉽고명확하게 바꿀 수 없을까요?
김진희	국민이 직접 만드는 앱, 국가 데이터와 연결되면 어떨까요?
김광수	왜 반민주세력이 집권만하면 it정책이 소멸하는걸까요? 이걸막을수 있는 민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김두현	AI를 활용해 만든 노래나 시는 누구의 창작물이며 저작권은 있을까요?
윤성원	정부의 디지털전환, 왜 국민은 여전히 불편한가요?

정보 접근성

고광채	왜 등기부 등본의 열람 비용이 아직도 있을까?
유명규	정부 기관이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은?
Kim james wontae	한국 사회는 본인 인증이 꼭 필요한 것인가?
송세나	내가 낸 세금의 지출내역을 보고받고 싶습니다.
장윤	시대가 변했는데 여론조사는 왜 전화로만 하나요?
장재섭	왜 그들은 어려운 용어를 써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까요?
박승규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정확한 정보(사실,진실)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재호	휴대폰 인증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경미	국민의 알 권리는 왜 항상 뒷전인가?
김재욱	스마트폰 구매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석철	고객센터 전화는 연결되기도 전에 스트레스부터 받습니다
황대용	가짜 뉴스 퇴치를 위해 정부 공식적인 보도자료 사이트가 필요 합니다.
염정문	아이폰은 지하철에서 승차용으로 태깅이 왜 안되나요?
이찬우	이동전화를 이용한 SMS와 음성 광고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한석규	진정한 민주화는 정보의 민주화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공개 되어야 하는 정보와, 공개 되지 않아야 하는 정보를 구별하는 기준이 어떤것일까?

윤성원	왜 가짜 텍스트 문서가 사라지지 않는가? 왜 공공부문은 단순하고 중요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가?
최유달	이재명의 정치체제에 대한 정보전달을 강화하고 있는가?
박종희	유아, 초등학생에게 스마트폰이 꼭 필요할까요?
김은경	10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수영	장애인의 ICT 기술 및 인터넷 접근성 강화, 이런 방향은 어떠신가요?
박성완	정부 정보공개를 쉽고 편하게 접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김해인	우리는 왜 뉴스 속 사건들의 결말을 모를까요?

개인정보 보호

김경일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를 은행으로부터 받았어요.
이건석	데이터를 수집 할 때 개인정보보호는 어디까지 지켜져야 할까요?
정병진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보안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 할 수 있을까?
곽동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주세요. 개인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로봇청소기 사용하시 촬영된 영상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한가요?
정유경	왜 인터넷 사용 보안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합니까?
윤동환	민주당의 사이버 보안 계획은?
김복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강간 피해와 동일한 트라우마를 가지는데, 처벌은 왜 이렇게 미약한가요?
김종희	보이스피싱 전화란 걸 감지하였을 때 통화 중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추적이 쉽지 않을까요?
홍창효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왜 어려울까?
박창영	개인의 정보를 시스템화 왜 하지 못할까요?
조성용	진정으로 공인인증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김용구	기업/기관들의 취약한 보안으로 개인정보가 해킹되었을 때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요?
임용현	카카오톡 기능 중 읽음숫자는 개인정보 아닌가요?
김지혜	부모가 성인자녀의 개인정보에 허락없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배혜정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나와야지 그제서야 수사한다고요? 미리 막을 수 있는데 왜 피해를 기다리나요?
박지원	보이스피싱 안 잡는건가요? 못 잡는건가요?
정영교	보이스피싱이 점점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개인 핸드폰 헤킹을 통한 보이스 피싱이 매우 심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 할 수있는 웹을 정부 차원에서 개발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인사	학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필요한가요?

가상자산

신대철	특정 운영체제에서만 작동하는 금융, 공공 사이트들 언제쯤 바뀔까요?
김영진	가상자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춘길	암호화 화폐를 연동한 결제시스템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강경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주성호	왜 우리나라는 크립토로 화폐 전환 못하는가?
서동근	양자화폐
이기용	왜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개인지갑 하드웨어의 판매와 관련하여, 은행권이 PG(결제대행)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학기술과 혁신
연구 개발

이민석	키오스크 어떻게 안될까?
우성우	미래 기술 및 과학의 미래를 좌우하는 과제가 왜 소수 학교의 교수들과 같은 전문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까?
안혜랑	현재 한국내 대기업과 언론 측에서 딥시크를 규제하는것에 대해서
정영조	첨단 기술 예산 수천억이 낭비되고 있어요.
이창현	고장나서 버려지는 아까운 물건들을 쉽게 고칠 수 있는 A/S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안되는 걸까?
정성묵	연구과제 평가 시 보고서의 양은 왜 이리 많은 걸까요?
정성묵	연구 과제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진득	국가의 주요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표화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김혜진	웹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공문서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쉬운 한글 버전도 함께 게시하면 어떨까요?
김상준	대왕고래 등의 쓸데없는 곳에 1000억을 낭비하지 않고, 미래 기술 분야에 제대로 투자하려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완영	AI가 난카이 대지진이 있을때 울릉도 아래의 불타는 얼음의 분출이 있을수 있다는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될까요?
남궁호	공공 데이터 개방이 부족할 경우, 한국의 AI 경쟁력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조성용	왜 애플 맥 OS를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이영희	공공 플랫폼은 왜 이용자들이 많지 않을까요?
편윤국	데이터 배당: 내 데이터의 가치는?
전찬경	건설 현장에는 기술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가라뫼	공공데이터포털에 왜 이렇게 API가 많은가요?
김철규	500Mhz-600Mhz 무선마이크 대역의 사용자를 확대해 주세요.
김범	AI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적으로 모두가 신뢰하고 투명한 아젠다 설정 및 정책합의 구조화는 과연 불가능한가요?
유현석	로봇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송명훈	전자 정부 시스템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 버린 건가요?
강수한	왜 R&D 확대를 위한 한국연구재단의 인센티브 개혁은 번번히 실패했나요?
김현철	아파트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되나요?
최가라뫼	CCTV, 로봇, AI를 통한 사생활 침해를 어떻게 막고, 어떻게 늦추고,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김욱진	아직도 손으로 도면을 그리는 기술자격증시험 시대에 맞는 시험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이성우	국책사업비 - 연구개발부서의 기자재로 제공되면 안되나요
이호성	국가기관 공문서는 왜 데이터로 제공되지 않는가?
도완영	디지털세-데이터세 전부터 이야기 있던데 결국 거둬야 하지 않나요?
윤성원	국민청원 데이터를 왜 사장시키나요?

박재혁	한 달 단위로 진척도 보고서 써서 내라는 연구 프로젝트 효율성을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김현일	정부가 수행한 연구 개발 결과를 국회가 평가해야 합니다.
정현철	왜 국가 행정망의 공개되는 통계데이터는 원본데이터(Raw Data)로 공개되지 않는가?
노우철	연구 개발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되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어 일정 수준의 배당을 하면 어떨까요?
오희경	내가 죽은 후 AI로 생성될 '나'를 제한할 수 있을까?
지병석	R&D 및 일반용역,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과도한 서류 제출 및 행정 절차 간소화 개선 요청
김새롬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연구물인데 왜 첨부파일이 미첨부된 연구물들이 있을까?
양지완	국가 기술 개발 단지를 만들어 주세요.

기반 기술

조규복	AI,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이 인간 중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안재홍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요?
정재광	엔비디아는 국가입니까? 우리나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효은	ai 시대 ai 활용의 그늘에 대해서도 토론해봤으면 합니다.
김현동	국가 기관이나 대학의 기초 연구가 국민 개개인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합니다.
홍재성	가장 유망한 미래 과학 기술 분야는 무엇일까요?
서경원	자본이 독점하게 될 Ai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견제를 해야 할까?
전재득	우리는 왜 세레브라스 같은 AI 시스템은 주로 언급 하지 않나요?
유현석	인공지능이 만약에 다운되면 내가할 수 있는건 무엇인가?
최근애	AI/ 딥시크 란.. (애플 아이폰 터치폰 V 최초심성스마트폰.) 긴단한 비유로 많이 홍보해주세요
김지훈	한국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현재 기존 질서의 4차 산업 혁명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 패권국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상훈	AI 공영화란 무엇일까요?
홍창효	인공지능 AI 가짜 영상을 규제할 순 없을까?
오홍균	영농형 태양광 솔루션을 통해 AI 서버에 전력 제공,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대규모 ESS 단지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민경	AI 디지털 교과서 꼭 전면 도입해야 할까요?
이재우	AI와 로봇이 일하면 이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눈송이랑	최근 엔지니어의 자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주용	인공지능 기술로 생산성이 늘어나는게 사실인가요?
김세련	대한민국 핸드폰 제조사들은, 어째서 다 똑같은 스마트폰을 만드는것일까요?
황대용	PC와 스마트 기기 동시 호환 되는 OS는 불가능 한가?
JIN YONGSHOU	4차혁명 AI 시대에 대한민국은 준비되었는가요?
구강영	공항 버드 스트라이크 방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석	과학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는 왜 소공인이나 개인이 하기 어려운 걸까?
서선옥	왜 우리나라에서는 기초 과학 발전이 중요한 국가 의제로 떠오르지 못했을까요?
김평기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신효순	국가 연구 개발 선진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박승원	어떻게 AI 투자의 공공 영역으로의 환수를 설계해야 할까요?
이현수	기술이나 인지도가 앞선 외국 기업을 규제하여 우리나라의 4차 산업계가 갈라파고스화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건	만약 AI에게 양심을 알려줄 수 있다면?
김학철	한국의 개인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박래권	AI 에이전트의 시대, 기술로 인하여 오히려 불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전우진	AI의 잠재적 위험을 방어할 알고리즘이나 대책이 동시에 연구되고 있는지, 정말로 안심 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전우진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대희	한국에선 AI를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AI를 만드는 실무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까?
조동근	인간 지능과 AI에 대하여
유상원	우리 인류가 AI와 양자컴퓨팅, 휴머노이드의 시대를 맞이하여 휴머니즘 알고리즘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래 인재

이민석	공무원 시험제도와 경직된 관료조직 채용방식이 공공부문의 혁신과 전문성에 도움이 되는가?
이승철	Ai,반도체,양자컴퓨터,로봇등 미래산업은 수학이 핵심인데 수학수재들이 모두 의대로 가버리면 대한민국은 후진국으로 떨어진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윤명애	고급 인력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최가라뫼	인공지능, 애매하고 어중간한 전문성으로는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이훈상	대한민국은 진정 IT 강국인가?
최진혁	말로만 하는 기술인 육성, 우리나라는 언제쯤 엔지니어들을 존중해 줄까요?
신인수	매년 박사학위자가 수만명 쏟아지는 AI 시대, 아직도 행정고시가 필요한가?
DOMIN LEE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상훈	슈퍼컴퓨터는 국가가 사는데 왜 AI 클러스터는 국가가 만들 생각을 안 하나요?
jheartu7036	왜 한국의 우수 인력들은 죄다 해외로 빠져나갈까요?
조규성	지속 가능한 과학 연구와 글로벌한 과학 리더십을 한국의 과학기관들이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thkim75	유출되는 인적자원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최종각	AI 시대에, 선행연구에 대한 박사학위가 있는데 왜 전 우리나라에서 할 일이 없는 걸까요?
김진태	전 국민 제안 드립니다. 과거 김대중 금모으기 있었다면 지금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전 국민 월 1구좌 1만원 지원 과학 지원 사업
이동회	지금도 국가인재들이 대책없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예림	경력단절 여성 과학자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합니다.

기술 혁신

이은식	한국의 오픈소스 생태계는 왜 발전하지 못할까요
김종갑	Web3를 통한 금융거래로 개인 간 결제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박예림	모두의질문Q 플랫폼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나요?

윤연정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민주당에서 막을 거죠?
이상무	직접 민주주의에 필요한 잦은 투표, 핸드폰으로 할 수 없나요?
도완영	상대적으로 대중에 폐쇄된 학문들에 AI와 빅데이터와 빅데이터간의 데이터 통합이 있으면 안될까요?
신은우	AI가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체능 분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최주천	기술의 발전으로 직접 민주주의 집단지성 체제가 가능할까요
안태환	딥 시크의 오픈소스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반응은?
김정국	공단, 국가기관 등에 스마트폰 앱은 따로 따로 만들어 놨을까요?

공동체와 신뢰
공동 가치관

한상욱	착하게 사는 건 왜 힘들까요? 아니면 왜 나쁘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박하연	당신은 정말로 정상인입니까?
민경문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심은영	사회 전반의 문제를 볼 때 내적, 심리적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NAMI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 아파 해야 하나요?
정연도	공감은 왜 주목받지 못하고 있을까?
박준혁	정의로운 행동이 유별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박완식	배금주의, 반지성주의 등과 같은 반문명의 시대를 막기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김도연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을까.
한경성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신동준	질문만큼 중요한 것은 명제다. 그대들은 어떤 명제를 가지고 있는가?
허석준	정의란 무엇인가(진보와 보수)
이민우	이 세상이 혹은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발전하고 풍요로워져야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 없는 세상이 될까요?
김봉훈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구조적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전현빈	정의는 왜 느린가?
이정민	우리가 언제부터 따뜻한 마음을 잃어갔는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김웅식	인간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는 무엇이고 이를 보편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유	우리 공동체의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구조인가요?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유토피아를 위한 세계관)
신의수	내일의 희망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시대에 살고 싶습니다.
장현수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보편적 선을 다시 당연하게 인식하게 할 수 있을까요?
RISTTO	살아가기 위해 계속적인 가치 증명이 필요한가요?
최민석	왜 도덕적 국가를 수립하지 못하는가?
HSLee-z8v	악은 거침없이 나아가는데 우리는 왜 한발한발 내딛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이 드는가…
yk3ds2jl6p	공평함과 공정함이란 무엇일까요?
Hwejinlim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혹은 무엇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김효영	상식(정의)이 통하는 나라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김연주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김동직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최가라뫼	우리의 경험을 인류의 경험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사랑	생존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하는 문화를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
김진민	규칙을 지키며 사는 것에는 왜 보상이 없다고 느껴질까요?
윤희정	왜 우리는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지요?
유제상	사랑과 용서와 감사라는 말이 어떻게 하면 힙한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marine153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도완영	챗GPT는 예수님의 사랑,부처님의 자비와 동일한 위대한 가르침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데 이거 교육할때 알려주고 있나요?
허정안	성실한 사람들을 위한 나라는 없나요?
정유진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서인찬	연말 시상식을 국가차원 잔치로 만들순 없을까?
이원홍	어떤 시민의식이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화향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상식에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곽정근	파시스트의 오류? "나는 나의 자유를 박탈해달라고 요구할 자유가 있다" 이 명제의 논리적 가치판단이 유익할까요?
김종수	상식이 무엇인가요? 상식이 무너지는 한국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다양체와 공동체 의식

하준서	민주당은 기득권의 일방적인 입장을 수긍하기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서동철	전 국민 MBTI 실시 하면 안되나요?
이정우	우리 사회가 점점 타인에 대한 무관심화가 증가되는데, 이것이 옳은 방향일까요?
양지원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접근성이 좋은 환경에서 사람을 만날려면 한국문화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김진욱	분열의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공존 하면서 번영 할 수 있을까요?
신영우	화폐 가치로 산정할 수 없는 가치를 인정하고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제민	생존,극단,분노,혐오를 없애기 위해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사랑,이해,협동,연민,조화를 이루어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유아기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할수있는 공동체 프로젝트를 정책적으로 펼쳐볼수 없을까?
박용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서로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엄종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상명	이기주의적인 사람과 이타주의적인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정성근	상호 공존과 존중의 화합을 이룰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 정말로 어려운것인가요?
장종하	다양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가치관을 수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가?
김사원	한국에 똘레랑스는 있는가?
김화영	은퇴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수있도록 공동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도영	공동체의 기본권과 생존권, 생활권의 안전을 위협하는 표현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을 해야 합니까?
조준근	한국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같고, 얼만큼 다를까요? 혹은 얼마나 닮아야 하고, 얼만큼 달라야 할까요?
김연웅	나 이외의 타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드릴 것인가?
최준호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이 아닌 틀린 것이라 생각하는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johnmarin5513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기 위한 전제조건들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김태진	나는 왜 이리도 외로운가요?
추종희	차별없이 함께 공부하고 놀고 함께 식사 할 수 있을까요?
이승혜	나이가 다르면 친구가 될 수 없나요?
유현석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세진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은 대한민국에 있나요?
손현옥	내란세력 종사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진시켜 부당하게 자리 배치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고 해결방법은 있는가?
권재진	한국인은 왜(Why)라는 질문을 터부시 할까?
최원철	제대로된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학귀	참여형 아파트 관리의 필요성과 확산 캠페인

갈등 대처

백경재	문화 지체 현상으로 인한 분열, 그리고 분열로 인한 외로움, 외로움을 열매 삼아 자라나는 혐오 정서, 이 사이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박선호	한국의 고발문화, 이대로 괜찮나요?
김양민	한국 사회의 일관성, 통일성이 뭔가요?
원도연	우리는 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게 되었을까요?
석은정	성별 세대 갈라치기 이대로 괜찮은가?
허남진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김순식	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을 구합니다.
신은희	방송, 유튜브, 일반 현수막 에서 책임감 없이 이루어지는 거짓말에 대해 누구나 어떤 단체든 처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김지현	물질주의,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계급화와 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현우	대한민국에 통합이란 필수인가?
송필종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선하는 가치가 무엇일까?
박준서	나날이 깊어가는 갈등, 법으로만 해결가능한가요?
김영호	왜 당장 서민, 극우, 좌파, 종북, 빨갱이 등 국가반역 외환유치 내란반란독재범죄자들이 만든 용어를 폐기하지 않나요?
김민영	반사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고희경	무리를 일으킨 자들의 뒤를 쫓으며 어지러운 것들을 치우며 나와 선량한 집단이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도록 이 문제를 제발 이 사회는 풀어야 합니다
이희만	왜 혐오를 조장하는 그릇된 페미니즘과 결별하지 않는 건가요?
차가운달-w3n	갈등과 혐오와 분노가 넘치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찾아갈 것인가?
이유	우리 공동체 모두가 2025년을 살아 가고 있는가?
김희수	길냥이에 대한 혐오감을 없애고 서로 융화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빠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영훈	최악의 세대? 이런 표현 그리고 이런 세대 나누기 꼭 해야하나요?
서상원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김태진	신뢰를 잃는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공동체 신뢰

송영환	청년들에게 함께하는 세상을 알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덕용	사회에서 격리해야되는 놈들은 분명 있습니다. 대통령이 용서하면 국민들이 편해지나요..
안혜랑	이 사이트의 질문의 옳고 그른지에 따른 판단과 , 진정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가름을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KIM ALBERT D	좋은 세상이란 무엇일까?
표승엽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회, 결과에 반성없는 사회가, 긍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진우	우리나라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마카다미아-i1p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marinesnow8428	우리가 만든 세상을 되돌아본 적이 있는가?
이유	전두환의 자연사는 막지 못 했지만, 전우원씨가 우리 공동체에서 잘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건 가능 합니다.
조영재	우리의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미래를 살기위해서 기존세대인 우리가 본질적이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것들은 무엇일까요?
김백민	80%의 인간들을 만족시키고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이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유현석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시대에 대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수진	안전한 국가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할까요?
김덕주	우리 민족 대 한풀이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현석	2025년 대한민국이 반드시 긴급하고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최우선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진태	모든 국민이 기초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세상, 미래의 세대를을 위한 현 우리의 의무가 안닐까 ?
신동호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어떠한 덕목이 필요할까요?
박찬식	우리사회 이대로 괜찮은가?
남궁진	현재의 지식과 지혜를 후대에 전달 할 수 있는 방안은 최선의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송승하	지금 한국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회 문화

한숙경	상식이 통하는 사회, 개인의 자유가 다른사람의 자유를 해치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이상무	왜 우리들은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김주원	담배꽁초 길거리에 버리기 가래침 뱉기 왜 우리나라만 많이 보이는 것 같죠?
이정우	왜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려 하지 않을까?
안상윤	긍정과 희망을 이야기 하는 문화가 필요하겠다

통일 및 국방
국가 안보

조성표	내란의 온상 육군사관학교의 교육과 일반 군인들의 정신교육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박재오	북미 스몰딜 가능성이 거의 100%가 되어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핵 능력 관련해서 국가 안보를 위한 노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민준	징병제 철폐와 모병제 실현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손주찬	이제 징병제 없애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윤출호	의무복무 중 순직군인의 명예를 이제는 국가가 온전히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차기수	육군사관학교 계속 유지 해야 하나요?
유재룡	독도는 안전한가요?
최소정	군인들의 인권과 처우는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나요?
김지성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아들들은 과연 의무만 존재하는가?
김영호	왜 주한미군 사병들은 월급을 많이 받는 건가요? 왜 주한미군에게 국민세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배건식	현재부터 미래의 국가방위 정책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영준	분단된 국가에서 국방을 책임지는 소중한 군인을 우리는 제대로 대우하고 있나요?
황인환	육군(육사출신) 중심의 국방체계가 맞나요?
이상엽	징집 된 우리 젊은이들에게 최저 시급 적용 하면 안될까요? 황제 노역도 최저 시급으로. . .
윤동환	핵무장 추진 계획이 있나요?
전희천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정환	내란과 관련 육사 교육체계를 어떻게 바꾸실건가요?
조용순	제 아들이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의심되는데,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김영환	이등병의 편지. 징병제가 필요한가요?
남동균	군사격으로 생긴 이명(귀울림)만으로 국가 유공자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이건석	국군은 유사시 북한군, 중국군을 이길 수 있나요?
신혜정	군 사망 사고는 왜 계속 반복되는가?
문용권	정년 퇴직 후 군 입대로 부족한 군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승춘	국력 신장을 위한 국토 확장 방안은 무엇일까요?
김영호	왜 주한미군의 대한민국 영토 사용에 대한 적절한 사용료를 똑바로 안 받고 있나요?
이송주	국위선양을 하는 분들의 능력을 군 특기로 분류하여 병역 특례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조지윤	왜 남자만 군대를 가야하나?
홍대식	우리나라도 모병제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요?
이대송	도심 속의 탄약고 옮길 수 없습니까?
강대삼	현행 군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하여야 하지 않나요?
김민호	월급 4만원 받고 복무했던 예비역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요?
jheartu7036	왜 한국은 주한미군에 모든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나요?
jandrozhov3245	이제는 모병제로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진한	한국은 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지 못하는가?
박병일	남녀평등 실현하자면 남녀 모두 징용 의무를 똑같이 해야하지 않나요?
이진한	미국이 군함을 한국에 발주를 한다면 이윤을 몇 %로 책정해야 될까요?
김수영	모병제는 아직인가요
김민석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성들은 안보무임승차를 주장하십니까?
김종철	굳건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미래 국방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박영준	왜 육군 3스타 4스타는 보병 포병 기갑 병과에서만 하나요?
곽대종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인상에 대해 미국의 국익을 들어 비용 인상에 반대함은 물론, 주한미군 반환 부지의 오염 제거 비용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도용호	왜 한국노무단(KSC)을 주한미군이 통제하나요?
이주영	군대 골프장이 필요한가?
임강빈	내란을 세 번이나 주도한 육사에 철퇴를 가하고, 군 조직에 특정 기관 출신이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법제화합시다.
박민찬	제대 군인에 대한 혜택을 줄 순 없는 건가요?
강병국	육사를 폐교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대영	미군 주둔 비용을 받아 내야 하지 않나요?
하태환	다음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감내할 수 있을까?
이현준	이제는 육군의 사관 양성이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평규	공군 민간 지역 오폭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성수아	의무병역기간을 1년 미만으로 줄일 수는 없을까요?
원수연	우리나라 군대 체계는 왜 더 나아질 수 없나요?
기노섭	소방전문 군부대는 없는것인가요?
고정진	병무청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유현우	현역군인들이 외치는 복무신도 또한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군사력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전쟁 연습 대신 사람 구하는 연습 안되나요?
박용성	외교/안보/국방 전략 재정립과 전략가(전략자원) 확대(질적 양적) 필요성에 대하여!
원경윤	20대남자 보수화(극우화)되는 현상 원인 중에 하나는 군대에서 매주 받는 정훈교육영향이 크다고 생각. 정권교체되면 반드시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재혁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에 있는데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까지 침범한 것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으며 내란죄도 분명하지 않나요?

북한/통일

김영호	100년을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 한민족의 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판형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 순간,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 맞나요?
황부석	평화 통일을 위해 오늘 남한이 할수 있는 일이 뭘까요. 북한과 교류할수 있는 방법은?
황부석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과 교류할수 있을까요?
김승우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보다, 통일 이후의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나?
허태범	한반도 민족 통일 프로세스를 어떻게 새롭게 세울까요?
김영호	왜 남북한은 평화통일을 못하고 있나요? 끊임없는 독재시도와 대를 이은 독재 때문인가요?
황숙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북한과 교류할 수 있을까요?

주은렬	언제까지 분단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야 하나요?
강주현	분단의 극복(평화통일)이 지금도 시대정신이 될 수 있는가?
한상문	지구상의 하나뿐인 분단 국가를 주변국이나 미국은 왜, 수수방관 하는지?
김사원	지금 미국이 거부하는 건 한국의 통일입니다.
박지나	20대가 가진 통일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장은수	80년 전까지 한 나라였던 한국과 조선은 언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김영호	남북철도 개통, 북극항만 개통은 대한민국 평화통일의 시작이자 끝이 아닐까요?
임일한	남북통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홍진숙	우리는 언제나 분단의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김영호	이재명 선출직 공무원님은 대통령 임기내에 남북철도 새통을 하실 수 있나요?
김영호	이재명 선출직 공무원님은 한민족의 민생경제의 핵심인 평화통일의 시작이자 완성인 남북철도개통에 목숨을 거실 준비가 되었나요?
윤승현	남북 통일 이전에도 제가 원하는 시기에 백두산과 금강산을 가고 싶습니다. 북한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유적지도 가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전학규	트럼프정부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승인 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우리의 대비책은 ?
유상봉	남북교류는 언제 가능할까요?
고다원	외부세력의 개입 없이, 남과 북의 이익만을 생각한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통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Go-jx8jj	우리 힘으로 한반도종전을 이루는게 왜이리 힘들지??
권제세	평화적인 남북 교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제세	남북 화해는 발전과 번영의 길인데, 왜 우리 스스로 이러한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까?
박병일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디인가요?
김철	남북 경협, 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박용식	우리의 통일의 꿈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나요?
김신호	통일에 대한 염원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일까요?
박창용	남북관계에서 갑작스러운 북한 붕괴와 함께 갑작스러운 통일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신범진	아직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이 유효한가요?
이동희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해 주세요
장규홍	이북5도위원회를 폐지합시다.
박경석	남북한간에 전쟁 발생을 방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평화통일로 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경석	현재의 대결적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할 구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윤성원	왜 우리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까?
최영길	다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만은 유지하게 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박병규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남남 갈등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 보훈

김태원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의병제대 후 보훈병원에 7급 결과를 받았으나 보훈처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대학병원마다 측정하는 기준이 다른
	동요mm가지고 심사를 하고 건측하고 비교하는 걸까요?
방가영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면서 국적이 없는 고려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요?
임재완	안중근 의사 유해를 찾아주시나요?

군인 처우

윤지영	장병들의 월급은 오르는데 직업군인을 선택한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의 월급은 왜 안오르나요?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모두의 질문Q 추진 경과

사전 준비	2024년 10월	프로젝트 기본 방향·사업 기간(2024. 11.~2025. 10.)·사업 내용 설정 사무국 구성
프로젝트 시행	2024년 11월	프로젝트 추진 체계 및 월별 로드맵 구체화 플랫폼 〈모두의 질문Q〉 개발 및 유튜브 채널 〈OPQR〉 개설 추진
	2024년 12월	계엄(12. 3.)에 따른 프로젝트 사업 기간 변경(2024. 11.~2025. 4.) 계엄 직후 인스타그램 통해 'whatsgoingonkor' 시행(12. 6.~) 질문Q레이터(국회의원 19명) 구성·상견례(12. 11.~12.) 및 운영(12. 13.~) 질문Q레이터에 대한 핵심 질문 대면 인터뷰 시행(12. 23.~) 〈OPQR〉 일반 시민 및 각계 전문가 인터뷰 영상 촬영 시행(12. 23.~)
	2025년 1월	분야별 전문가(45명)에 대한 핵심 질문 대면 인터뷰 시행(1. 7.~) 유튜브 채널 〈OPQR〉에 영상 업로드 시행(1. 25.~)
	2025년 2월	〈녹서 2025(Green Paper)〉 목차 및 내용 구성 등 구체화 논의(2. 3.~) 〈다 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 출범식 개최(2. 7.) 플랫폼 〈모두의 질문Q〉 질문 수집 및 인터뷰 영상 제공 시행(2. 7.~) 협단체에 〈현재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 질의서 발송(2. 11.~) 플랫폼 〈모두의 질문Q〉 모바일 버전 출시(2. 17.~) 플랫폼 〈모두의 질문Q〉 토론Q 게시판 시행(2. 25.~) 당대표·전문가 대담〈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OPQR 촬영(2. 25.)
	2025년 3월	당대표·전문가 대담〈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OPQR 영상 공개(3. 2.) 〈녹서 2025(Green Paper)〉 제작 시행(3. 5.~) 플랫폼 〈모두의 질문Q〉 참여 시민 '나만의 녹서(PDF)' 제작 홍보(3. 24.~) 플랫폼 〈모두의 질문Q〉 녹서 제작용 질문 수집 종료(3. 31.)
	2025년 4월	〈녹서 2025(Green Paper)〉 초안 제작(4.18.) 〈녹서 2025(Green Paper)〉 제작 완료(4.27.) 플랫폼 〈모두의 질문Q〉 참여 시민 '나만의 녹서(PDF)' 제공(4. 18.~)
	2025년 5월	〈녹서 2025(Green Paper)〉 전달식 개최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함께 낸 사람들

발 행 인 이 한 주 민주연구원장
공 동 박 태 웅 모두의 질문Q 대표
대 표 김 성 환 대표 질문Q레이터 · 국회의원

발 간 일 2025년 4월 27일
발 행 처 금종각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320

질문Q레이터

모 경 종 국회의원 · 운영
이 성 윤 국회의원 · 법사
김 남 근 국회의원 · 정무
김 영 환 국회의원 · 기재
김 준 혁 국회의원 · 교육
황 정 아 국회의원 · 과기
이 훈 기 국회의원 · 방통
위 성 락 국회의원 · 외통
박 선 원 국회의원 · 국방
채 현 일 국회의원 · 행정
이 기 헌 국회의원 · 문체
윤 준 병 국회의원 · 농림
허 성 무 국회의원 · 산업
박 지 혜 국회의원 · 기후
김 윤 국회의원 · 보건
김 남 희 국회의원 · 복지
이 용 우 국회의원 · 노동
손 명 수 국회의원 · 국토
전 진 숙 국회의원 · 여성

책임보좌진

유 신 욱 선임비서관
이 성 민 비서관
이 지 백 보좌관
강 태 영 선임비서관
최 원 석 선임비서관
조 나 연 선임비서관
허 승 보좌관
이 수 현 선임비서관
한 재 호 비서관
박 기 일 보좌관
신 지 원 비서관
최 현 보좌관
정 부 권 보좌관
이 진 선 선임비서관
허 희 수 보좌관
홍 춘 택 보좌관
이 승 환 선임비서관
김 종 화 보좌관
이 슬 지 비서관

사무국

송 창 욱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 규 섭 더불어민주당 국장
이 진 복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 병 윤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조 도 형 민주연구원 부국장
염 갑 헌 더불어민주당 부국장
김 용 정 김성환 의원실 보좌관
주 영 광 김성환 의원실 선임비서관
이 근 화 더불어민주당 차장
이 수 호 前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부장

다이나믹 앤 라이브

홍 영 훈 플랫폼 컨설팅

스튜디오 오피큐알

최 별 연출
지 희 연출
김 연 준 연출
한 선 정 구성
조 민 아 구성
이 아 현 구성
이 영 광 촬영
이 기 성 촬영
이 상 준 편집
전 성 구 편집
김 용 완 촬영감독
권 민 철 촬영감독
김 민 회 촬영감독
하 종 철 촬영감독

금종각 디자인 스튜디오

이 지 현 총괄 · 디자인
송 지 은 PM · 데이터가공
이 혜 정 편집
박 수 정 채널운영 · CG
유 지 수 데이터가공
이 은 채 편집 보조
김 이 연 디자인 어시스트
PiaWagner 디자인 어시스트
윤 나 라 디자인 어시스트
송 민 수 제작관리(서울프로아트)

ISBN 979-11-992559-7-5 03070

Green Paper 2025

당신의 질문이 세상을 바꿀 때까지, 모두의 질문Q

979-11-992559-7-5 03070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7 민주당사 8층
본 도서는 비매품입니다

녹서 2025

사람·민주주의 그리고 질문
01 질문의 시작
02 변화의 방향

모두의 질문 하이라이트
01 몰아보기
① 정치 및 거버넌스
② 사회 및 복지
③ 법과 윤리
④ 교육과 입시 제도
⑤ 경제 및 산업
⑥ 도시 및 주거
⑦ 노동 및 고용
⑧ 가족과 라이프스타일
⑨ 문화 및 미디어
⑩ 건강과 의료
⑪ 환경 및 기후변화
⑫ 국제관계 및 외교
⑬ 디지털 사회와 정보화
⑭ 과학기술과 혁신
⑮ 공동체와 신뢰
⑯ 통일 및 국방
02 오늘 필요한 질문
03 세상에 이런 질문

질문 2025
01 전문가
02 OPQR
03 질문Q레이터
04 협회 및 단체 I
05 협회 및 단체 II

모두의 질문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당신의 질문이 세상을 바꿀 때까지, 모두의 질문Q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녹서 2025

정치 및 거버넌스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뽑고 해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회 및 복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정말 사라져야 할 존재일까요?

법과 윤리
범행 액수가 300억 이상인 경제 사범은 왜 모두 형을 살지 않지요?

교육과 입시 제도
우리 아이들은 언제까지 입시 전쟁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느린 학습자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정책은 없나요?

경제 및 산업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농협의 공적 기능이 작동하고 있나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도시 및 주거
청년들도 근로소득으로 집을 사는 세상, 만들 수 있을까요?
전세 사기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가요?

노동 및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과 차별을 해소할 대책은 뭔가요?
40대, 50대의 갑작스러운 퇴직 후 재취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족과 라이프스타일
오직 혈연관계만이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마땅한가?

문화 및 미디어
언론은 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건강과 의료
지방 및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이 심각한데 정부의 해결책은?

환경 및 기후변화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국제관계 및 외교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디지털 사회와 정보화
포털도 이제는 그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과학기술과 혁신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공동체와 신뢰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통일 및 국방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방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모두의 질문을 담은 책 · Green Paper 2025